



15

독일통일 총서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15

독일통일 총서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15

회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CONTENTS



화폐통합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들어가며	10
제1장 화폐통합의 정치적 배경	13
제2장 체제경쟁 40년	16
제1절 기본 경제상황	16
제2절 산업구조	20
1. 에너지/연료공업	21
2. 화학공업	22
3. 석재공업	23
4. 철강/비철금속공업	23
5. 기계/차량공업	24
6. 전자/정밀기계/광학	25
7. 섬유공업	25
8. 식량/기호품공업	25
제3절 국가재정	27
1. 중앙계획경제와 국가재정	27
2. 재정수입 구조	29
3. 재정지출 구조	31

제4절 은행제도	32
1. 역할	32
2. 은행제도의 조직과 구조	34
제5절 동독 마르크	35
제6절 대외경제	37
제3장 동독의 경제위기	39
제4장 화폐통합 과정	46
제1절 동독인의 이주행렬	47
제2절 화폐통합 논란	48
제3절 화폐통합의 정치적 선택	51
제4절 화폐교환비율의 결정	55
제5절 화폐통합의 실행	59
제6절 연방은행의 관할권 확대	61
제7절 동독 은행제도 개혁	63
제5장 화폐통합의 경제적 충격	66
제6장 화폐통합의 부작용	73
제1절 банкр런	73
제2절 외환 스캔들	74
제3절 사기	77
제4절 도난	77
제5절 은행의 부당이익	78
제7장 화폐통합 25년	92
제8장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100

CONTENTS



정책문서를 통해 본 화폐통합과 독일통일

들어가며	110
제1장 동독경제와 금융	112
제2장 변혁기-통합으로의 길, 통일을 위한 구상	123
제3장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와 결정	129
제4장 화폐교환비율	139
제5장 화폐통합조약	151
제6장 화폐통합의 후속조치	156
제7장 금융제도의 개편에 대한 연방감사원의 평가	160
제8장 화폐통합 분석이 주는 시사점	174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82
문서 요약	196
문서 요약(문서번호 1~71)	196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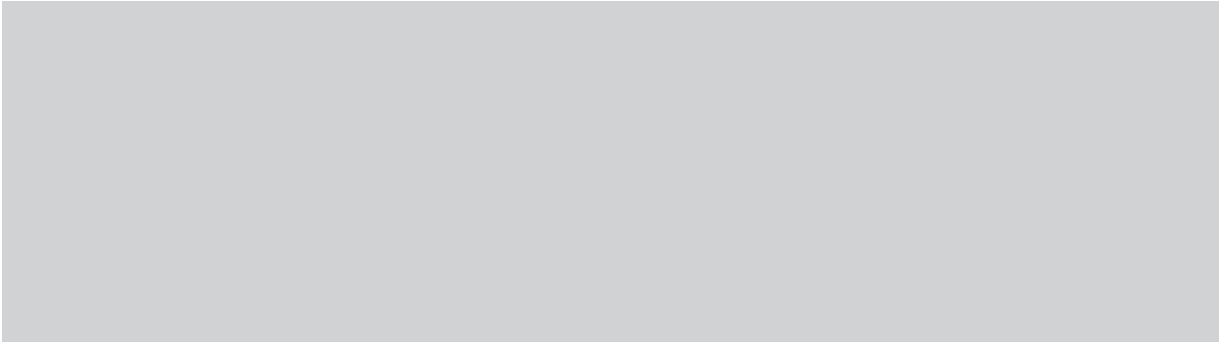
표 목차

표 1-1) 동서독 주요 지표(1989년 기준)	17
표 1-2) 4인 근로자 가계의 순소득 지출구조	18
표 1-3) 도시별 산업총생산 비중(1988년)	20
표 1-4) 동독의 산업구조(1988년)	21
표 1-5)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	22
표 1-6)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1988년)	27
표 1-7) 동독의 국가재정(1988년)	31
표 2-1) 동독 금융기관들의 구채무 청구권	164
표 2-2) 서독은행에 의한 동독 금융기관 인수	167
표 2-3) 동서독 화폐통합 연표	177

그림 목차

그림 1-1) 동독주민의 이주행렬(1989-1990년)	48
그림 1-2) 동독 근로자 가계저축률(두 자녀 가구)	67
그림 1-3) 동독지역의 산업생산 변화	69
그림 1-4) 동서독지역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 혐오인구 비율(2012년)	93
그림 1-5) 구동독의 구조전환-산업부문별 취업인구 비중	94
그림 1-6) 동서독지역 산업의 매출 중 수출의 비중	95
그림 1-7) 정규직 근로자 월소득총액(2013년)	96
그림 1-8) 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주민의 비율(2012년)	98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화폐통합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 호 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들어가며

독일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동서독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지도 4반세기 이상이 흘렀다. 평소 주도면밀한 독일인들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과 같은 것이었다. 1989년은 동독에게 건국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공식적으로는 이를 기념하는 축제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이 당시만 해도 1년 후에 동독, 즉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견한 독일인은 아무도 없었다. 해외에서도 동독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었다. 동독 지도부가 호언했던 막강한 지지기반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상상은 더더욱 근거 없다는 비판을 자초했을 것이다. 동독 공산당인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 SED)’ 당원 수만 해도 거의 230만 명으로 동독 성인인구의 1/6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소위 위성정당인 ‘형제정당’, 청년조직인 ‘자유독일청년단’, 노동단체인 ‘자유독일노조연맹’, 예비군에 해당하는 ‘기업전투집단(Betriebskampfgruppe)’ 등도 막강한 회원 수를 자랑하고 있었다.

사실 동독의 체제전환의 물꼬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 공산당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한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이 동독의 정치환경에도 더디게나마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동독 지도부는 개혁을

거부했지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소수의 동독 재야운동에서뿐만 아니라 동독 공산당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었다. 동독 정권의 정당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첫 번째 분명한 조짐은 1989년 5월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를 조작한 사건에 대한 항의시위에서 나타났다. 그해 여름에는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이주를 요구하면서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의 동독대사관을 점거했다. 9월에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했고 동독인들은 서방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자유와 여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대 규모는 갈수록 커져갔다. 같은 해 10월 베를린을 방문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너무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다”라는 함축성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동독 개혁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가지고 동베를린 주재 소련대사관에 동의를 구하고자 했지만 당시 소련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0월 중순에는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가 물러났고, 11월 9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동독에서 통일운동이 확산된 데에는 동독의 경제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동독경제의 부실한 모습이 예전에는 생산설비의 잦은 가동중단에서 감지만 되었을 뿐,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었다. 동독경제의 실상에 관한 정보는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면서 1989년 가을부터는 공개되기 시작했다. 1989년 10월 7일에만도 호네커 서기장은 동독이 건국 이래 ‘현대적인 구조와 뛰어난 능률을 가진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이미 ‘세계 10대 공업국에 속하는 동독경제의 생산성은 마이크로전자 기술을 활용해서 더 빨리 상승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하지만 실상은 동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살고 있었다. 갈수록 많은 경제적 자원이 소비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생산적 투자는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자산소비적 사회정책’(Hübner 1998)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출수입과 해외차입은 ‘경제정책

과 사회정책의 통일'이라는 당초 당 노선에서 예정되었던 것처럼 생산설비 구매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식량과 같은 소비재 구입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독일통일은 서독과 동독의 체제경쟁에서 동독이 패배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화폐통합에 이르게 된 정치적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화폐통합을 필요하게 만든 동독의 경제위기 상황을 동독의 자체 비밀문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일반적인 경제상황을 일별하고자 한다.

화폐통합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둘러싼 학계와 정계에서의 논란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화폐통합의 협상과정 및 내용, 실행과정에 대해 일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화폐통합이라는 '충격요법'이 동독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화폐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이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화폐통합이라는 역사적 격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행위나 그에 준하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화폐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서독은행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어떻게, 얼마나 악용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반도통일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화폐통합 4반세기가 지난 지금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경제상황을 비교함으로써 화폐통합의 당초 목표였던 '동서독 생활수준의 균등화'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이어서 독일 화폐통합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장

화폐통합의 정치적 배경

40년에 걸친 일당독재체제를 종식시킨 동독의 평화적 혁명은 동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개혁운동의 일부였다. ‘철의 장막’을 걷어내는 이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추동했던 페레스트로이카 덕분이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서 냉전의 해소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지만 소련의 경제적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방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소련의 내적 요구에 따른 사회주의 개혁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사이에 동유럽의 정치적 지형이 급변했다. 동유럽에서 1989년이 혁명의 해였다면 1990년은 자유로운 민주선거의 해였다. 자유, 민족자율, 독립은 물론 시장경제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이 개혁운동의 주요 목표들이었다. 소련에서의 개혁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매우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기정사실들이 형성되어 동유럽의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라이프치히의 시위가 갈수록 고조되자 동독 공산당 정권은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개혁운동의 한복판에서 동독은 분단으로 인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동독의 개혁은 그 진행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 서독의 존재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다. 40여 년에 걸쳐 진행된 두 나라의 체제경쟁 속에서 서독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된 동방정책은 무엇보다도



두 나라 사이의 정보의 흐름을 비록 비대칭적으로나마 원활하게 했으며,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의 이주에 대한 법적, 사실적 제약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 적었다. 동독인들은 대부분 서독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서독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자가 급증했다. 1990년 3월 말까지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이주자가 발생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동독은 주민의 3%를 잃은 셈이었다. 그중에는 특히 서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 숙련인력이 많았다. 이는 당시 숙련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서독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성과가 부진했던 동독에게는 재앙이었다. 이러한 급속한 이주는 국경이 개방되고 향후 동서독의 관계를 점진적인 동화로 설정했던 초기 발상들, 가령 당시 콜 수상의 10개항계획이 실행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독 마르크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간다”는 당시 동독 시위대의 구호는 동독 주민에게 동독에 머물지라도 조만간 그들의 상태가 지속가능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서독정부는 1990년 2월 7일 ‘경제화폐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협상을 동독정부에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3월 18일 인민회의 선거결과는 이러한 동맹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신속한 정치적 통일에 대한 찬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독이 서독의 경제사회질서를 대폭 상당 부분을 도입하고 상당 부분의 주권을 연방은행과 같은 서독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을 뜻하는 이 ‘경제화폐동맹’은 국가적 통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정치적 통일을 위한 정확한 일정은 전혀 잡혀 있지 않았다. 이는 또한 동서독과 4개 연합국(2+4) 사이에서 이루어진 독일통일의 외교안보 측면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는 속도에도 좌우되었다. 이 협상에서는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할지가 결정적인 문제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독일통일을 결정적으로

지연시킬 수는 없었다. 1990년 후반을 지나면서 다시 구성된 동독의 5개 주가 서독헌법 23조에 따라 서독에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전독의회가 독일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통일독일은 40여 년 동안 보존된 서독의 구성원리를 수용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와 함께 자유로운 연방법치 국가로 건설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천은 특히 동독뿐만 아니라 서독의 주민과 기업에게 엄청난 변화를 의미했다. 여기에서는 화폐통합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동서독 체제경쟁 40년을 결산해보기로 한다.

체제경쟁 40년¹

제1절 기본 경제상황

동독의 경제발전을 위한 출발조건은 분명 서독에 비해 불리했다. 독일의 탈군사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포츠담협정에 의거하여 동독에서는 소련이 상당한 산업시설을 해체하여 본국으로 가져간 데 반해 서독에서는 그러한 해체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동서냉전의 국제환경 하에서 ‘마셜 플랜’을 통해 경제재건을 위한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이 서독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된 현실을 출발조건인 차이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80년대 후반 들어 갈수록 체제 내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은 공식 통계와는 반대로 체계적으로 미화되고 있었고, 대체로 정체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훗날 경제계획 담당자들의 고백이었다.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는 전체적으로 부족했고, 그에 따라 국민경제의 자본스톡은 낙후되었다. 이는 기업의 생산자본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에도 해당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의 도입도 대부분 포기되었다. 그 결과 서독과 비교할

¹ 이 장은 화폐통합이 발효되기 직전에 작성된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수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해져 주민의 생활수준도 낮아졌다. 1980년대 말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동시에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동베를린의 대기오염이 서베를린에 비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표 1-1) 동서독 주요 지표(1989년 기준)

	면적 (1,000km ²)	인구 (백만 명)	취업인구 (백만 명)	GDP (10억 마르크*)	세계무역 비중(%)	대선진국 수출** (10억 DM)
동독	108.0	16.5	9.0	353.0	1.0	5.5
서독	249	62	28	2,237	10	550

* 동독은 동독 마르크, 서독은 서독 마르크 표시.

** 내독무역 제외.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먼저 동독은 국토면적에서 서독의 43% 수준이었지만, 인구는 27% 수준이었다. 국민총생산에서는 서독의 1/6 수준이었지만, 국제분업에 참여하는 정도는 서독에 크게 뒤떨어졌다(표 1-1) 참조). 두 나라 사이에는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했다. 서독과는 가격구조와 생산구조가 상이할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고 단지 편차가 적지 않은 추정치만 있을 뿐이지만 격차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다음 절 참조). 국민생산의 비교에서도 격차는 확인된다. 서방의 국민경제 통계방식에 따르면 동독의 국내총생산은 1989년에 3,530억 동독 마르크를 달성했다. 1:1 비율로 서독 마르크로 환산하면 구매력이 대등하다고 가정할 때 이는 서독의 약 1/6에 해당하며, 취업자 1인당으로는 절반, 주민 1인당으로는 약 60%에 달하는 수치이다. 실제 격차는 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물의 품질 또한 열등했고 공급애로가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수준에서는 격차가 훨씬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독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동독 근로자 4인 가족의 평균 순소득은 1989년 약 2,300 동독 마르크였다. 참고로 서독에서는 4,100 서독 마르크였다. 그밖에 서독의 높은 소득은 짧은 노동시간(주당 노동시간이 서독은 38시간, 동독은 43시간)에 외벌이 가정



이 달성하는 소득이었다. 반면에 동독 가계에서는 여성의 높은 취업률(서독의 50%에 비해 83%)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동독의 소비관행을 기초로 하여 구매력에 따른 정정을 거칠지라도 소득격차에는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값비싼 공산품의 비중이 높은 서독의 상품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독 가계의 소득우위는 더 커질 것이다.

재화그룹별 소득지출 비중이 상이했던 사실은 1차적으로 상이한 소비관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다(〈표 1-2〉 참조). 그것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왜곡된 가격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동독에서 가격은 대부분 재화와 용역의 비용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격은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의 도구였다. 식량과 교통서비스, 임대료(난방, 전기, 가스 포함)는 특히 국가의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매우 저렴했다. 통일 후 동독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빵값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빵이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난방비가 저렴하다보니 난방을 끄지 않고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직장에 출근하는 사례도 있었다.

표 1-2) 4인 근로자 가계의 순소득 지출구조*

(단위 : %)

항목	동독	서독
생필품	22.7	16.5
기호품	8.2	3.8
신발/의복	12.5	5.6
기타 공산품	22.6	20.7
임대료, 난방, 전기, 가스	3.7	21.9
자동차세/보험/수수료/이자	9.19	10.8
기타 서비스	7.6	13.1
자산 형성/부채 상환	12.8	7.6
합계	100.0 (= 2,308 동독 마르크)	100.0 (= 4,115 서독 마르크)

* 이 구조는 특히 가계유형과 산출방식의 차이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비교가 가능함.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동독에서는 적지 않은 가격이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

독 가계는 평균적으로 임대료로 소득의 5%도 지출하지 않았다. 이는 서독의 약 2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서독주민의 주거면적이 더 넓은 데 기인하기도 했다(1인당 36m² 대 27m²). 아울러 동독 주택에서는 편의성이 부족했다(중앙난방비율이 서독은 71%인데 비해 동독은 41%). 또한 동독에서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주택의 상태가 열악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동서독의 임대료 격차 4배가 모두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독 가정이 내구소비재를 구비한 정도는 서구의 기준으로 본다면 소박했다. 동독 가정의 절반만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이마저도 품질면에서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서독은 100가구당 94가구). 마찬가지로 동독 가구의 절반만이 칼라TV를 보유하고 있었다(서독에서는 100가구당 89.4가구). 동독에서 전화기는 사치재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6가구당 1가구만이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비해 서독에서는 흔한 생필품이었다. 동독에서는 100만 건 이상의 전화기 신청서가 처리되지 못했다. 서독에서는 이미 많은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많은 제품들이 동독에서는 사실상 보급되지 않았거나 매우 드물었다. 세탁물건조기,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CD플레이어, 가정용컴퓨터가 그러했다².

동독은 자신의 사회안전망을 특별한 업적의 하나로 내세우곤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서독의 사회안전망에 비해 중요한 약점을 드러냈다. 가령 노령연금은 1989년 말 450 마르크 정도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부실했다. 단지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특혜처럼 소수의 분야에서는 서독에서보다 앞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했다.

생산수단의 소유는 거의 국가의 수중에만 있었다. 국가소유 100%를 '사회주의의 완성'으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산업은 완전히 국유화되어 있었고 교통부문도 거의 100% 국가소유였다. 동독에서 잔존

.....

² 통일 직전 동독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베를린에 소재하는 동독박물관(DDR Museum)에서 체험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



하던 사영기업은 대부분 소매업, 요식업, 수공업에 국한되었다. 특히 수공업에 서는 거의 80,000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었다. 사영기업에 종사하던 취업자 수는 약 4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5%에 달했다.

산업, 운수, 인구가 지역적으로나 국지적으로 집중되고 고도로 도시화된 경제권은 동베를린과 막데부르크를 제외하고 동독 남부지역(드레스덴/켄니츠, 츠빅кау/할레/라이프치히)에 위치해 있었다. 할레,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켄니츠를 아우르는 경제권에서만 동독 산업총생산의 절반가량이 생산되었다. 반면에 로스톡, 슈베린, 노이브란덴부르크를 아우르는 북부경제권은 규모는 비슷했지만 비중이 7.7%에 지나지 않았다.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도 남북격차가 두드러졌다.

표 1-3) 도시별 산업총생산 비중(1988년)

(단위 : %)

도시	로스톡	슈베린	노이브란덴부르크	포츠담	프랑크푸르트/오데르	코트부스	막데부르크
비중	3.3	2.53	1.9	5.7	7.0	6.2	6.6

도시	할레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켄니츠	에르푸르트	게라	줄	동베를린
비중	15.9	7.9	10.7	12.3	6.8	4.8	3.0	5.6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제2절 산업구조

동독의 공업생산은 서독의 약 1/4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약 2/3에 달했다. 서독의 40%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이었다.

표 1-4) 동독의 산업구조(1988년)

(단위 : %)

부문	식품/기호품공업	수자원	에너지/연료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비중	15	1	7	20	10
부문	철강/비철금속	석재공업	기계/차량공업	전자/정밀기계/광학	섬유
비중	9	2	21	9	6

출처: 독일경제연구소(DIW), 동독통계연감.

거의 모든 공업생산이 수많은 개별기업들을 결합하고 있던 콤비나트에서 이루어졌다. 약 130개에 달했던 콤비나트는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었고 95개의 소규모 콤비나트는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동독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독 수준의 1/3 내지 1/2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나라의 노동생산성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동독에서는 비용과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 직전 동독기업의 생산성이 예전보다 더 비관적으로 추정되었던 이유는 많은 동독 생산물의 품질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동독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무엇보다도 납품되는 자재의 결합과 납품 지연, 지나치게 높은 자기생산 비중, 과도한 관리비용, 노동자들의 동기 부족, 낙후된 생산설비,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등에 기인했다.

주요 산업부문으로는 다음 8가지를 거론할 수 있으며 이들 부문이 공업 총생산의 약 90%를 차지했다.

1. 에너지/연료공업

동독에서는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70%가 국내산 갈탄으로 충당되었다. 1978년부터 석탄은 더 이상 채굴되지 않았다. 수입 에너지원으로는 석유와 가스가 있었으며 원자력에너지는 서독보다 훨씬 적게 사용되었다. 동독은 세계 갈탄생산량의 1/4을 차지하는 최대생산국이었다. 발열량은 낮으면서 유



황과 수분 함량이 높은 저품질의 갈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을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낡은 발전설비의 성능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효율성 손실과 에너지 낭비가 매우 심했다. 그리하여 동독의 1인당 에너지소비가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였다. 여기에는 가계가 소비하는 에너지에 대한 높은 보조금도 한몫했다. 서독의 1인당 에너지소비는 동독보다 1/5 내지 1/4 적었다.

표 1-5)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

(단위 : %)

	서독(1989년)	동독(1987년)
석유	40.3	13.2
석탄	19.2	3.8
가스	16.9	9.4
원자력	12.5	2.9
갈탄	8.5	69.7
수력	2.6	1.0

출처: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 6. 18.

동독 에너지산업이 안고 있던 또 다른 문제는 발전기술이 매우 낡았을뿐만 아니라 갈탄사용량이 많았다는 점이다. 몇몇 발전소는 가동연한을 넘겼을뿐만 아니라 서구식의 탈황설비나 탈질소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동독은 유럽에서 이산화황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했다. 주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유럽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였다.

2. 화학공업

동독의 화학공업은 대부분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었다. 현대적인 석유 화학공장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설비가 2차대전 이전에 갖추어진 것이었다. 공장들은 주로 할레/라이프치히권(로이나, 부나, 비터펠트)과 슈베트/오데르에 밀집되어 있었다. 14개 콤비나트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는 독점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 원자재 생산지에 가깝게 입지해서 기초생산물과 대량

생산물을 생산(갈탄을 화학원료로 가공)했을 뿐 부가가치 생산은 높지 않았다. 그리하여 가령 동독 전체 화학공업에서 합성수지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독의 26%에 비해 약 12%로 매우 낮았다. 그나마 동독의 합성수지가공은 서독의 생산성 수준에 가장 먼저 접근한 부분이었다. 동독 화학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비료였다. 비료는 서방에 대한 주요수출품이기도 했다.

3. 석재공업

건축자재산업은 동독에서 가장 취약한 산업부문에 속했다. 콤나트 구조의 이동성 부족은 고품질의 건축자재가 도입되는 것을 막았다. 주택건설기술에서는 조립식주택방식이 지배적이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임대료가 낮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에서는 성장동력이 발생할 수 없었다. 건축물 품질은 오히려 다시 열악해지는 상황이었다. 동독 주택의 40% 이상이 입주한 지 70년 이상 되어 낡았다. 반면에 서독에서는 그 비중이 21% 정도였다. 전체 공업생산에서 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대부터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종사자 수는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4. 철강/비철금속공업

동독의 철강공장은 매우 노후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 너무 작았다.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공정이 사용되는 철강생산설비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38%). 반면에 서독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제강기술의 비중이 90%에 달했다. 산소철강공장의 원강생산 비중이 28%에 그쳐 서독의 80%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서독에서는 1983년부터 더 이상 투입되지 않고 있는 전통적인 지멘스-마르탱노 공법에 따라 생산된 원강의 비중이 동독에서는 42%를 넘었다. 고부가가치의 철강제품에 집중하는 서독기업들과는 달리 동독 철



강공업은 특히 재가공역량의 부족 때문에 단순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동독에는 열연강판 생산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을 위해서 열연강판 반제품을 압연해야 했다. 서구에서와는 반대로 동독에서 철강산업 종사자는 크게 증가했다. 유럽의 과잉설비가 동독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았다. 철강생산을 자립하려는 의욕이 동독이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주요동기로 작용했다.

5. 기계/차량공업

상호경제협력기구(COMECON) 내에서 합의된 분업에 의거하여 동독 기계공업 제품은 주로 소련에 공급되었다. 따라서 생산물의 종류는 주로 소련의 필요에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했다. 소련은 인쇄기의 절반, 농기계의 41%, 선박 및 선박장비의 27%를 동독에서 수입했다. 나아가 동독은 중장비와 공작기계 분야가 탁월했다. 컴퓨터기반 기계의 비중은 특히 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리스트에 의거한 공급제한으로 인해 서방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았다. 공작기계와 인쇄기 부문에서는 동독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자동차공업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에서도 낙후되어 있었다. 개인교통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관심이 매우 적었다.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대기수요가 3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이미 보급된 승용차 수에 버금가는 수치였다. 조선공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로스톡에 소재하는 조선콤비나트와 슈트랄준트에 소재하는 세계 최대 어선조선소는 소련의 대규모 수요 덕분에 대량생산의 이점을 살릴 수 있었다. 가령 30종의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적지 않은 비용절감이 가능했었다. 나아가 조선소는 소련의 대대적인 보수 주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6. 전자/정밀기계/광학

이 부문은 현대화 정도에서 매우 이질적이었다. 마이크로전자에서 동독은 막대한 투자 덕분에 서방을 상당히 추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었다. 전자데이터처리 설비를 유일하게 제작하던 로보트론 콤비나트는 서방 경쟁자들과는 달리 모든 부품을 사실상 자체생산했다. 전구, 냉장고, 전동타자기와 같은 소비재의 대서방 수출은 상당히 두드러졌지만 통신 분야는 발전 수준이 낮았다. 기계적 최종재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비효율적인 자립경제 추구하고 자본부족과 함께 ‘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리스트는 강력한 기술이전과 혁신 주기의 단축을 방해했다. 반면에 칼 차이스 콤비나트에서 생산되는 광학기계, 가령 망원경, 우주선카메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7. 섬유공업

서독에서는 섬유공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었던 데 반해 동독에서는 콤비나트로 조직한 결과 기업 규모가 매우 컸다. 주로 표준화된 대량 생산품이 생산되었다. 제3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강한 경쟁 상대로 부상했다. 사회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경직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을 전환하기 어려웠다. 자본부족으로 인해 유연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 없었다. 독일 섬유산업이 작센/튀링겐으로 집중되던 2차대전 이전에 도입된 기계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고급 섬유제품에 대한 주민의 대기수요는 매우 컸다.

8. 식량/기호품공업

주민에 대한 생필품 공급이 양적인 면에서는 좋았다. 그러나 식량은 질이



낮았으며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다. 가령 육류와 같은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의 품질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맥주와 같은 다른 생필품에서도 생산설비가 크게 부족했다. 몰락하기 전 20년 동안 특히 고급 제품의 품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여기에서도 자립경제 목표가 경쟁 부족을 초래하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동독의 농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했다. 서독에 비해 인구 대비 2배가 넓었던 동독의 농경지는 모두 사회주의 부문에 속했다. 공업에서처럼 대형화를 모범으로 농업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40% 정도에 머물렀고 면적생산성은 약 75%에 그쳤다.

농업용 기계의 상태는 동독이 몰락하기 전 수년 동안 악화되고 있었다. 동독에서 농산물과 가공 제품(육류, 계란 등)의 생산자가격은 유럽연합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과일, 계란, 가금류 등 일부 농축산물은 상당 부분 개인생산자들에 의해 생산되어 공급상황이 개선되기도 했다.

동독의 교통망은 노선구성이나 확장상태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운송부문은 동독경제에서 애로가 두드러진 부문이었다. 철도망뿐만 아니라 도로망도 낙후되어 있었다. 1980년대 초부터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철도를 화물운송수단으로 집중 이용함에 따라 철로가 크게 혹사당했다. 전체 철도망의 1/3이 공사구간이었고, 따라서 감속구간이었다. 화물차량은 기껏해야 시속 60km, 여객차량은 시속 100km로 달렸다. 동독정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4,000km의 철도망 중에서 7,000-9,000km가 완전히 새로이 건설되어야 했다. 나아가 주요 노선의 전기화와 복선화, 신호체계 및 역사의 현대화와 보수가 필요했다. 아울러 차량(궤차, 기관차)도 교체되고 대형화되어야 했다. 컨테이너 운반에 필요한 화물차량도 없었다.

표 1-6) 운송수단별 화물운송량(1988년)

(단위 : 백만 톤)

	동독	서독
철도	349.4	302.2
원격도로	27.0	390.5
근거리도로	518.1	2,180.0
원격파이프수송	37.0	68.8
내륙수로	20.3	233.3
항공	0.03	1.08

출처: 연방교통부, 동독통계연감, 1989.

도로망은 서독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았지만 상태는 마찬가지로 열악했다. 고속도로와 주변도로의 노면, 하부, 진입로뿐만 아니라 조망상태도 열악했다. 동독 고속도로의 2/3 가량이 2차대전 이전에 건설된 것이었다. 그렇지 않은 고속도로는 주로 서독의 재정지원으로 건설되고, 유지되었던 베를린-함부르크, 베를린-헬름슈테트 사이의 통과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라이프치히-드레스덴, 베를린-로스톡 고속도로와 베를린 순환도로 일부가 있었을 뿐이다. 서독에서는 화물운송의 10%도 차지하지 않았던 도로와 철도의 결합교통이 동독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교통망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통일 후 시급한 교체투자를 위해서만도 1,00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보였다. 환경, 에너지, 통신, 소비재산업(주택건설 제외)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분야에서 5,00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서독의 연간 설비투자 규모와 맞먹는 금액이었다.

제3절 국가재정

1. 중앙계획경제와 국가재정

동독의 중앙계획경제에서는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계획과 조종을 위해



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인적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쳤을뿐만 아니라(분배기능), 국민경제의 자원을 개별 사용영역, 부문, 지역에 배분하고(배분기능) 각각의 5개년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과업의 달성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국가의 예산감독에 포함되어 있었다(통제기능).

국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재정이 국가에 의해 수립된 수량계획에 대한 화폐적 대응계산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거시경제적 계획목표치가 다양한 재화종류와 미시경제적 차원(콤비나트, 기업)에 할당되었고, 기업의 재무계획목표로 전환되었다. 그러므로서 국가재정계획은 부문과 분야별로 투자를 포함한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확정했다.

동독의 국가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 여타 지방정부의 예산, 사회보험 예산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 하위 차원의 재정은 각각의 상위 지도차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통제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각각의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에 대하여 지휘권을 가졌다. 동독의 지방정부 사이에서 서독식의 재정조정은 없었다.

거시경제적 계획도구로서 국가재정은 연간수지로서뿐만 아니라 5개년계획의 전망계획으로서도 작성되었다(중기재정계획). 1989년도 동독통계연감에 따르면 1988년도 동독 예산은 2,700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지출의 73%는 중앙정부에 할당되었고, 약 20%가 지방정부 그리고 약 7%가 사회보험에 할당되었다.

재무부는 다른 모든 재정기구 및 차원에 대하여 지휘권을 가졌다. 독립적인 권력기관(회계감사원이나 기타 유사 기관)에 의한 집행부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정집행의 규칙과 원칙(완벽성, 총액일치의 원칙, 명확성, 공개성 등)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서독의 것과 일치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서로만 남아 있었다.

2. 재정수입 구조

동독의 예산회계에서는 4가지 유형의 수입이 구분될 수 있다. 인민소유 콤비나트 및 기업으로부터의 납입금, 조세, 사회보험 분담금, 기타 분담금 및 사용료, 수수료가 그것이다. 이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큰 수입원이 인민소유부문으로부터의 납입금으로서 1988년에 총수입 2,060억 동독 마르크의 76.4%를 차지했다. 이 납입금은 생산기금공과금, 상업기금공과금, 이윤납입금, 생산물 관련 공과금, 사회기금에 대한 분담금으로 징수되었다.

생산기금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공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민소유 기업이 보유한 생산요소 자본(설비자산과 유동자산)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서독의 재산세와 유사한 이 공과금은 대체로 투입된 총설비자산 및 유동자산(1986년부터는 과세기반의 순가치)의 6%에 달했다. 상업기금공과금은 국영 도소매업, 생산수단거래, 호텔 및 요식업에 부과되었다. 이때 공과금부과율은 1%(호텔 및 요식업)에서 6% 사이였다. 두 공과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1988년 300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순이윤납입금은 국가가 임의로 정하는 납입금이었다. 부과율을 변경함으로써 국가는 구조정책과 직접적인 투자조정을 시도했다. 납입금은 과세기반이 되는 이윤이 독립적인 잔여변수로서 계산되고 거기에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윤세와 차이가 있다. 과세부담은 각의의 의결에 따라 매년 기업별로 확정되었다. 순이윤은 계획된 총이윤에서 생산기금공과금을 제하고 산정되었다.

기업의 제품가격, 비용, 계획에 따른 이윤할증은 국가가 책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순이윤의 크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계획을 초과하는 이윤은 재정계획에 정해진 비중에 따라서 국가재정으로 납입되고 나머지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사회기금과 수당기금을 포함하는 기업기금으로 산입되어야 했다. 실현된 이윤이 계획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기업들은 정해진 순이윤납입금을 납부해야 했다. 1988년에 순이윤납입금에서 발생한



수입이 435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생산물 관련 공과금은 본질적으로 기업가격(자기비용+이윤)과 산업양도 가격(생산물 관련 공과금을 포함하여 도소매기업 및 모든 직접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인수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소비세였다. 이 공과금은 일단 각 콤비나트에 부과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가계가 해당 재화를 구매할 때 부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1988년에 430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1984년 말에는 사회기금을 위한 분담금이 도입되었다. 공업과 건설업에서 징수된 이 공과금은 각각 계획된 임금기금(임금총액)의 70%에 달했다. 이는 한때 서독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임금총액세와 유사한 것이었다. 이 항목은 1988년 재정수입에 350억 동독 마르크나 기여했다.

민간부문에 부과되면서 예산에서 드러난 조세로는 생산협동조합, 수공업, 사영기업에 대한 공과금과 임금소득세, 지방세가 있다. 조세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7.7%(208억 동독 마르크)에 지나지 않았고 이중 3.7%를 임금소득세가 차지했다.

서독과는 반대로 동독에서는 일련의 직업군과 기업군에 대하여 소위 경제정책의 '계급투쟁적 성격'을 반영하는 특유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가령 근로자활동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임금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반면에 잔존하는 민간부문(자영업, 자유업, 임대업, 자산)의 이윤 또는 총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5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 89%의 한계세율이 적용되었고 40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98%까지 상승했다.

동독에서 자본회사는 1989년 11월 정치적 개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부담했으며 25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다. 그 밖에 영업세와 재산세가 있었지만 이들은 사소한 재정적 의미밖에 가지지 못했다.

표 1-7) 동독의 국가재정(1988년)

(단위 : 10억 동독 마르크)

세입		세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콤비나트 및 인민소유 기업 납입금	206.0	투자 및 R&D 직접 보조금	98.9
조세 및 공과금	20.8	가격지지	60.6
사회보장 부담금	18.8	국가소비	64.0
수수료, 이용료, 부담금	3.0	가계이전	30.5
은행 및 보험 납입금	9.8	총투자	16.0
기타 수입	11.6	-	-
합계	270.0	합계	270.0

출처: 동독통계연보 1988년.

영업이익세는 최고 20%에 달했으며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 과세기반에서 징수될 수 있었다. 자본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0.5-2.5%의 세율이, 법인의 경우에는 2-2.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법인세, 영업세, 재산세 부담을 모두 합산할 경우에-소득 또는 이윤과 비교할 때-한계세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최종소비가 중간재 생산보다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산협동조합의 실적에 대해서는 최고 45%의 이윤세가 부과되었던 반면에 중간재 공급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60%가 적용되었다.

사회보장분담금은 동독 재정수입의 3대 원천으로서 1988년 188억 동독 마르크가 징수되어 총수입의 7%를 차지했다. 노동자와 협동농장 구성원의 분담률은 수입의 10%였고 기업의 분담률이 임금과 급여의 12.5%였다. 자영업자 소득에서는 20%가 징수되었다.

3. 재정지출 구조

동독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조도 사회주의적 조종시스템과 국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했다. 재정지출에서 보조금 지급이 큰 비중을 차지했



었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이다.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이 1988년에 989억 동독 마르크로서 전체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인민 소유 경제부문에 대한 보조금, 농업 지원금, 국영기업의 연구 및 직업훈련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비자가격, 협정요금,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낮은 가격의 형태로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었지만 기업에 지불되었다. 1988년 가격지지 규모는 606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고, 이 중 320억 동독 마르크가 식량가격 보조금이었다.

보조금 및 가격지지와 더불어 국가소비는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개별항목이었다. 여기에는 인건비 지출(국가 공무원의 임금, 급여)과 특히 국방을 위한 현물지출에 필요한 지급이 포함되었다. 1988년 국가소비 규모는 640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네 번째로 큰 지출항목이 사회보장급여 형태(연금, 질병수당, 양육수당, 직업훈련지원금, 실업지원금)로 가계에 지급되는 이전지출이었다. 1988년에 이 지출은 305억 동독 마르크에 달했다.

동독의 재정지출 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순수한’ 투자지출의 비중이 눈에 띄게 적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지원과 상관이 있었다. 1988년 총투자는 160억 동독 마르크로서 총지출의 5.9%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교통망의 유지보수와 주택 현대화를 위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4절 은행제도

1. 역할

동독에서 1990년 봄까지 유효했던 1단계 은행체제는 그 기본골격이 1970년대 초에 형성되었다. 이 시기가 지난 다음 은행체제는 다양한 개혁국면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중앙집중화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다. 동독의 은행

기구는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은행의 핵심임무는 (중앙계획에 따른 자원배분을 통한 국민소득의) 분배기능, 통제기능, 촉진기능(즉, 경제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동독기업들에게는 국가신용계획의 기준에 따라서 신용이 은행제도를 통해서 배정되었다. 대출과 저축에 대한 이자율은 경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했다. 화폐시장이나 자본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투자재원이 은행 차입 이외에 기업의 자체 자원(감가상각 및 이윤)과 국가 재정에서의 보조금으로 조달되었다는 점에서는 선진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였지만 대부분 중앙계획에 의해 결정되었고 각 재원의 비중이 달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든 기업은 자신을 담당하는 상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의무가 있었다. 아울러 어떤 계좌에 어떤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사전에 지시되었다. 현금보유는 좁은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었다. 주민들도 현금잔고는 가능한 한 적게 보유해야 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저축금고(Sparkasse)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동독의 1단계 은행체제에서 중앙은행(Staatsbank)에게는 계획달성이라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자본조종을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통화정책은 통화공급의 변동과 국민경제 재화생산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목표를 추구했다. 이 점에서는 서방 중앙은행과 유사한 목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용 할당, 조건 설정, 투입 통제를 수단으로 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중앙은행은 은행과 저축금고에서의 계좌잔고와 계좌이동, 그리고 현금유통계획을 이용하여 화폐유통을 조사하고 통제했다.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신용경제도 중앙계획에 의해 조종되는 조건 하에서는 비공식시장에서의 가격인플레이션이나 '현금인플레이션'을 방지할 때 발생하는 조정문제나 위험은 기업의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소득의 지출이나 노동력의 투입에서 가계가 가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공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다.



2. 은행제도의 조직과 구조

동독의 은행제도는 중앙은행, 국영상업은행, 협동조합은행, 저축금고로 구성되어 있었다.

1) 중앙은행

동독의 중앙은행은 발권은행이자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했다. 중앙은행 총재는 각료회의의 구성원이었고 다른 상업은행들에 대하여 지휘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발권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을 계획하고 규제했다. 중앙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들의 계좌를 보유하고 저축은 물론 리파이낸싱 신용 공급에 관한 조건을 결정했으며 금융기관들의 지불거래, 정산거래, 신용거래에서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중앙은행 지점은 지방행정의 금융부서와 협력하여 국가재정의 ‘현금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했다. 국가재정의 계좌는 중앙은행이 관리했다.

상업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은 공업, 건설업, 국내상업, 교통, 우정, 통신 등의 분야는 물론 주민에 대한 외환 판매도 담당했다. 중앙은행은 180개 지역 지점을 운영했고 콤비나트에 41개 공업지점, 그리고 100개가 넘는 지국 및 환전소를 운영했다.

2) 저축금고

시와 군의 평의회는 시설로서 196개의 기관이 2,500개 이상의 지국(점업으로 운영되는 중개소 제외)을 운영하면서 재무부의 통제를 받았다. 이들은 가계, 임금수취자, 자유직업자, 소매상인, 개인 수공업자, 자영업자들과의 은행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저축예금, 보통예금, 급여계좌와 함께 내구소비재 및 주택건설에 필요한 소규모 신용대출이 있었다. 동독 저축예금 중에서 저축금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말 약 80%를 차지했다. 그 밖에 우체국저축예금소, 우편환국, 제국철도저축금고, 제국철도금

고가 은행서비스를 제공했다.

3) 여타 금융기관

그 밖에 중앙은행 산하에는 특유한 고객군과 업무군을 상대로 하는 다음과 같은 상업은행들이 있었다.

독일대외무역은행주식회사(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ABA)는 14개의 지점을 두고 대외경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불거래, 정산거래를 결제했으며 대외무역기업의 재원을 조달했다. 독일상업은행주식회사(Deutsche Handelsbank AG; DHB)는 대외경제거래(특히 통과무역과 3각무역)를 담당하는 특수기관이었다. 농업식량산업은행(Bank für Landwirtschaft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BLN)은 산하 농민무역회사(Bäuerlichen Handelsgesellschaften; BHG)와 농촌주민의 저축거래와 지불거래를 결제했다. 96개의 수공업영업협동조합금고(Genossenschaftskassen für Handwerk und Gewerbe; GK)는 주로 협동조합이나 개인의 수공업기업과 상업기업을 위해 저축업무와 신용업무를 담당했다.

제5절 동독 마르크

동독 마르크는 1990년 7월 1일 서독 마르크가 도입될 때까지 순수한 국내통화였다. 태환성이 없었고 다른 통화와의 공식적인 교환은 비상업부문(주로 해외관광)에서만 가능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몇몇 예외(루블화)를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동서독 간 여행에서는 1989년 말까지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었다. 서방 방문객들은 이 비율로 최소금액을 환전할 의무가 있었다. 서독으로 여행하는 동독주민은 이 환율로 1인당 15 서독 마르크를 환전할 수 있었다. 서독주민이 동독주민에게 이체하는 현금선물도 이 환율로 결제되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관광객 거래에서 최소환전제는 폐지되었고 1 서독 마르크 = 3 동독 마르크의 환율이 적용되었다. 동서독 간 여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외환기금 덕분에 14세가 넘는 동독인은 1인당 1년에 한 차례 200 서독 마르크를(최초 100 서독 마르크는 1:1, 두 번째 100 서독 마르크에 대해서는 1:5 환율로) 환전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동독에 거주하는 개인과 기업은 1990년 초부터 동독중앙은행에 외화계좌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의 대외무역에서는 공식적인 교환비율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서방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은 환율은 존재하지 않았다. 동독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1989년 가을 서방에서 1 서독 마르크를 벌기 위해서는 4.40 동독 마르크만큼의 재화를 수출해야 했다. 그렇지만 이 추정치가 균형환율로서 가지는 설명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적이었다.

- 동독에서 가격비율은 실제적인 희소성비율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정보가 없었다.
- 수출입이 정책적으로 조종되었다.
- 서방과의 서비스교역(관광, 통근고용)은 매우 적었다.
- 민간자본거래가 없었다.
- 동독의 대외채무와 외환보유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

서방과 동독 마르크 지폐로 이루어지는 무역에서 산정된 환율은 수요와 공급의 우연적인 운동의 결과로서 형성된 가격이었다. 그러나 동독 마르크의 수출입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불법거래에 지나지 않았다.

1989년 11월 동서독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 마르크화에 대한 평가는 극심한 변동을 보였다. 동독 마르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도 서

독주민들이 (비자신청 의무와 최소환전제가 폐지된 다음) 동독여행을 위해 환전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방에서 동독 마르크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도 급증했다. 1990년 전반기가 지나면서 서독과의 조속한 통화동맹과 신속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전망이 밝아질수록 서방에서 동독 마르크 지폐에 대한 평가는 상승했다.

제6절 대외경제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의 독점은 동독경제를 국제경쟁의 압력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차단했다. 따라서 동독제품은 일반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 결과 동독이 국제분업에 참여하는 수준도 낮았고 서방과의 무역도 활발하지 못했다. 오히려 동독의 대외무역전략은 원칙적으로 서방과의 교역을 최소화하는 역내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상호경제원조위원회(COMECON) 회원국들과의 무역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공식 통계에 따르면 동독 대외무역의 2/3가 이들 나라와의 것이었다.

동독에게 중요한 무역상대국은 소련으로서 이와는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40%에 이르렀다. 반대로 동독도 소련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었다. 다만 여기에서는 동독과의 무역이 대략 10%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두 나라의 무역은-두 나라가 COMECON 회원국들과 행한 무역과 마찬가지로-두 나라 정부가 채택하고 결국에는 콤비나트와 기업의 계약으로 채워지는 연례의정서에 기초해서 결제되었다. 1989년 11월에 1990년도 연례의정서가 서명되었다. 그에 따르면 동독의 수출은 68억 대체루블(TRbl)³, 수입은 64억 대체루블에 이를 예정이었다. 동독의 주요 수출상품은 기계, 장비, 운송수단, 공업용 소비재로 구성되었던 반면에 소련은 동독의 에너지 및 원료 수

.....

³ 대체루블은 COMECON무역에서 사용된 정산단위였다. 공식 교환비율은 동독 마르크가 아니라 외환동독 마르크에 대해서만 1:4.67로 존재했다.



입수요의 대부분을 충족시켰다. 가령 1990년에는 석유 1,700만 톤, 천연가스 80억³, 석탄 450만 톤의 공급이 예정되었다. 동독의 대소 수출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던 노동력은 거의 50만 명, 동독 산업인력의 약 15%에 이르렀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나라들과의 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통계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이들과의 상품교역에서 정산을 위해 적용된 대체루블 환율은 매우 비현실적이었으며 가격은 세계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으로부터도 괴리되었을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에 따라서 상이한, 왜곡된 가격이었다. 따라서 공식적인 무역데이터는 무역집중도를 계산하는 데 조건부로 사용될 수 있었을 뿐이다. 동독 국내가격과 근사치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새로 추정한 무역비중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령 소련과의 무역비중은 거의 40%에서 약 25%로 급감한 반면에 서방국가들과의 무역비중은-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면-50% 이상으로 높아졌다.

동독의 대서방 무역의 절반 이상이 내독무역이었다. 1989년 총액이 약 150억 서독 마르크였다. 이는 서독무역의 1%가 채 안되는 규모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상대국은-서방의 통계에 따르면-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였다. 서방 선진국들과의 무역총액은-내독무역을 제외하면-1989년에 110억 서독 마르크 수준이었다.

동독의 대외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수지, 채무, 외환보유에 관한 수치가 공표되었지만 비교할 수 있는 과거 수치도 없었고 그것을 산정하는 방법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신뢰할 수 있었다. 서방의 추정에 따르면 동독의 대외채무는-내독 지불거래 안팎의 서독 마르크 신용을 포함할 때-1989년 말 약 200억 달러에 달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동독의 대외채권은 10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순채무가 1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했다.

동독의 경제위기

1989년 호네커가 퇴진하면서 취임한 에곤 크렌츠 서기장은 동독경제 실상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때 조사에 참여한 인물은 당시 동독경제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르하르트 쉬러(Gerhard Schürer)는 당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호네커에게 경제정책 노선의 전환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한 인물이다. 게르하르트 바일(Gerhard Beil)은 1986년부터 대외무역장관이였다. 알렉산더 샬크-골로드콥스키(Alexander Schalck-Golodkowski)는 공식적으로는 대외무역부차관이었으나 동시에 동독비밀경찰 대령으로 위장해서 활동하던 정보요원이기도 했다. 그는 동독비밀경찰의 서독 내 비밀경제제국으로 불리던 '상업조정분과'를 이끌었다. 에른스트 회프너(Ernst Höfner)는 1981년부터 재무장관이였다. 마지막으로 아르노 돈다(Arno Donda)는 1963년부터 국가중앙통계관리소를 지휘했다.

이들이 10월 30일 제출한 보고서(Schürer/Beil/Schalck/Höfner 1989)에서 나타난 동독경제의 실상은 문자 그대로 재앙이었다. 동독은 '국가부도'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축적률이 1970년 29%에서 1989년 21%로 하락하면서 생산부문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산적 투자를 위한 축적률이 1970년 16.1%에서 1988년 9.9%로 하락했다. 주택건설을 포함한 비생산부문에서의 축적률은 1970년대 이후 약 9%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1970년부터 1988년까지 생산부문에서의 투자는 122% 상승한 반면에 주택건설을 포함한 비생산부문에서의 투자는 200% 상승했다. 자원이 건설에 집중되면서 보건과 같은 민생부문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마이크로전자, 공작기계제작, 공업용기계제작은 물론 가구공업이나 유리도자기공업과 같은 경공업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최신 설비들이 도입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설비마모율이 공업에서는 1975년 47.1%에서 1988년 53.8%로, 건설부문에서는 49%에서 67%로, 교통부문에서는 48.4%에서 52.1%로, 농업산림식량경제부문에서는 50.2%에서 61.3%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유지보수작업이 과도하게 필요해졌다. 수작업에 의존하는 중업원의 비중이 공업에서 1980년대 이후 40%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

동시에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일련의 과학기술 성과가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생산적 축적의 감소는 특히 1986년부터 생산 및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갈수록 부문 간 불비례가 심각해지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국민소득 증가속도는 3.6%이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므로 1985년까지 달성했던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생산적 축적의 장기적인 감소는 1990년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제8차 당대회 이후 소비는 전반적으로 자기실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것이 주로 ‘비사회주의 경제부문(Nicht Sozialistisches Wirtschaftsgebiet)’의 부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문의 부채가 1970년 20억 청산마

르크(VM)⁴에서 1989년 490억 청산마르크로 증가했다.

게다가 동독주민의 화폐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는 주민에게 공급되는 상품기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빨랐다. 이는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상당한 구매력 과잉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주요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국민소득성장률은 3.6%, 상품기금증가율은 4.0%, 주민의 순화폐소득증가율은 4.3%, 주민의 1인당 실질소득증가율은 4.5%였다. 이는 실적증가율은 계획목표에 미치지 못했던 데 반해 소비, 주택건설,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다는 의미이다. 1986-1990년의 5개년계획에 의거한 국민소득성장률 목표치는 4.8%였기 때문에 실제 실적치와는 1.2%포인트 차이가 나타났다. 5년 동안의 이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60억 동독 마르크가 된다. 이러한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축적의 감소, 국내부채의 증가, 해외차입의 증가가 감수되었다.

구매력과 상품기금 사이의 비율의 변천은 초과구매력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순화폐소득은 연간 4.3% 증가하여 상품기금 증가율 4%보다 빨랐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이는 138.9% 대 131.4%의 비율로 요약된다. 초과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그 규모는 60억 마르크에 달했다. 이는 주민 전체의 연간 순화폐소득 증가분과 비슷한 규모였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평균임금 상승의 비율에서도 목표와 실적의 괴리는 나타났다.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그 비율은 1.54:1이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1.2:1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보험저축을 포함해서 저축예금이 1985년 1,360억 동독 마르크에서 1989년말 1,750억 동독 마르크로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6.5% 증가를 의미한다.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1989년 50억 동독 마르크로 예상되었다. 이는 같은

.....

⁴ 청산마르크(Verrechnungsmark)는 서독 마르크와의 결산에 적용되는 계산단위였다. 1 VM은 1 서독 마르크(DM)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DM이 VM으로 불리기도 했다.



해 상품기금 증가보다 많은 금액이다. 저축예금의 증가는 한편으로 사회의 발전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장래 생활수준의 향상에 관한 소망을 표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구매욕구, 특히 고급 내구소비재(승용차, 음향기기, TV 등)에 대한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채무는 세입에 비한 지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 1970년 약 120억 동독 마르크에서 1988년 1,230억 동독 마르크로 증가했다. 1989년과 1990년에도 세입이 200억 동독 마르크 가량 부족할 것이므로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해 1990년에는 1,400억 동독 마르크에 이를 것이다.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국가채무 증가, 재생산과정에서의 부진한 효율성 향상, 국제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비용에 의거한 공산품 가격 결정 등은 동독 화폐의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요인들이다.

3.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대한 1986-1990년 5개년계획은 크게 미달했다. 이미 1971-1980년 사이에 210억 VM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었다. 그로 인해 발생한 해외차입과 이자가 오늘날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대외채무의 주요원인이다.

1981년부터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경상수지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1981-1985년 사이에 특히 난방연료를 경유에서 갈탄 및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석유제품을 유리한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무역흑자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 흑자 덕분에 1980-1986년 사이에 대서방 순채무는 280억 VM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86년부터는 특히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무역흑자가 감소했다. 1986-1988년 사이에 대외채무로 인한 비용과 이자만 해도 대략 130억 VM에 달했던 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에 무역흑자는 약 10억 VM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동독 경제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1986-1990년 사이의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수출목표는 생산성 향상의 부

족으로 140억 VM 미달했던 반면에 수입목표는 약 150억 VM 초과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금속가공업과 마이크로전자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입한 69억 VM 상당의 기계와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목표의 미달로 인해 1986-1990년 사이에 당초 계획되었던 무역흑자 231억 VM 대신에 무역적자 60억 VM이 발생했고, 대서방 순채무는 1989년 말 490억 VM으로, 1985년 대비 190%로 급증했다. 이때 서방 순채무 규모는 동독의 1989년 수출의 약 4배에 해당했다.

1989년에 계획된 외환수입은 특히 채무원금 상환, 이자지불, 수입에 필요한 외환지출의 약 35%만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65%는 은행차입과 여타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이는 곧 기존 채무의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이 새로운 채무에 의해서만 상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자지불을 위해서만도 재정수입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국제기준은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대비 수출의 비율로 측정되는 채무상환비율이 2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야 수입과 기타 지출을 위해 수출의 75%가 사용될 수 있다. 동독은 비사회주의경제권 수출과 관련하여 1989년에 채무상환비율이 150%에 이르렀다.

1990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초안 자료에 기초할 때 경상수지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대서방 순채무는 비사회주의경제권 무역흑자가 3-5억 VM일 경우 1990년 말에 약 570억 VM으로 증가할 것이다. 1990년에 비용과 이자를 합쳐 80억 VM을 초과할 것이다.

대서방 순채무가 증가하지 않으려면 1990년에 국내생산에서 300 동독 마르크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는 3년에 걸친 국민소득 증가(계획치)에 해당하며 소비가 25-30%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지불능력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무역흑자가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초과수출(10억 VM)	2.0	4.6	6.7	9.2	10.2	11.3

이러한 조건 하에서 동독의 대서방 순채무는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다.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대서방 순채무(10억 VM)	55.5	62.0	63.7	62.0	60.0	57.0

그러나 이러한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전제가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충족될 수 없다. 당면한 지불불능의 결과는 채무유예이다. 이 경우 국제통화기금이 동독의 정책결정에 개입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국제통화기금이 비용 동향, 통화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경제적 개입의 중단, 기업의 민영화, 보조금 축소 내지 중단, 국가의 수입정책 결정 중단을 수반한다.

대외비로 분류되었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의 대외채무는 절망적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급증하던 대외채무는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1989년 말 490억 외환마르크⁵에 달했다. 그 밖에 국가재정은 국내은행에 1,230억 동독 마르크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독 연방은행이 주장하듯이 동독경제가 완전한 초과채무 상태에 있는지는 의문일지라도 동독이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생산 증가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비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⁵ 외환마르크(Valutamark)는 대외무역에서 적용되는 계산단위였다. 그 산정방식은 비밀에 붙여져 있었지만 1989년에는 1 외환마르크가 4 동독 마르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Brenke 2015).

없었고 이로 인해 지도부는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호네커 이 후 취임한 크렌츠 정부나 모드로우 정부는 동독 자체적인 경제개혁을 추진 함으로써 자립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개혁의 중심에는 엄격한 계획경제와의 결별, 기업의 경제적 자율성 확대, 실적에 부응하는 임금체 계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전략이 있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활동도 대폭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소유관계의 핵심은 국영기업의 유지였기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49%까지만 허용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거의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독의 지원 전망이 어두웠을뿐만 아니라 동독인들이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폐통합 과정

통일독일에서 화폐통합은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에도 2015년에도, 5년을 주기로 화폐통합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평가는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열광과 충격 등으로 매번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화폐교환비율에 대해서는 1:1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에 비하면 화폐통합의 정치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Brenke 2015). 불안정한 대외정치적 상황, 특히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화폐통합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화폐통합 방안에 대해 콜 수상에게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티로 자라친(Thilo Sarrazin)에 따르면 화폐통합은 ‘독일통일로 가는 불가피한 초석’으로서 당시에는 동독을 어떤 방식으로든 돌이킬 수 없게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비록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동서독통일에 동의했지만 소련의 국내 정치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아울러 국경이 개방된 상황에서 동독인들의 이주행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동독인들 손에 서독 마르크를 쥐어주는 길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티로 자라친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면 동서독 사이에 관세장벽을 쌓아야 했을 것이고, 이주행렬은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동독의 평균소득은 1,100-1,400 동독 마르크였고 당시 시장환율은 1:7이었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동독가족이 서독으로 이주해서 사회부조금을 신청하면 대략 1,000 서독 마르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동독 마르크로 환산하면 7,000 마르크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화폐교환비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서독 마르크 도입으로 동독인들의 소득이 서독 수준과 접근할 것이라는 환상을 정치인들이 심어준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했다.

제1절 동독인의 이주행렬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미 사회주의 경제의 종식은 예고되었다. 서독으로의 대량이주가 곧바로 시작되었다. 동독인들은 자국의 자립적인 경제발전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을뿐만 아니라 서독 수준의 생활수준을 조속히 달성하려는 열망이 강했다. 그래서 시위의 성격이 갈수록 사회주의 개혁에서 통일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고 급기야 대량이주행렬로 이어졌다. 1989년 11월에 73,000명, 12월에 59,000명,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50,000명에 달했다. 동독이 출혈상태에 빠졌다. 동독을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에 접근시키려는 구상이나 계획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이주행렬은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 다만 이들 수치에는 당시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서베를린 포함) 일자리로 출퇴근하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주행렬과 국경을 넘나드는 출퇴근은 서독에게는 당시 부족하던 숙련 노동력의 보충을 의미했지만 동독에게는 경제 재건에 필수적인 인력의 유출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동독은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소위 ‘임금보전금고’를 설치하여 서독에서 일하는 동독인의 임금을 동독 마르크로 환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서독일자리가 갖는 매력을 떨어뜨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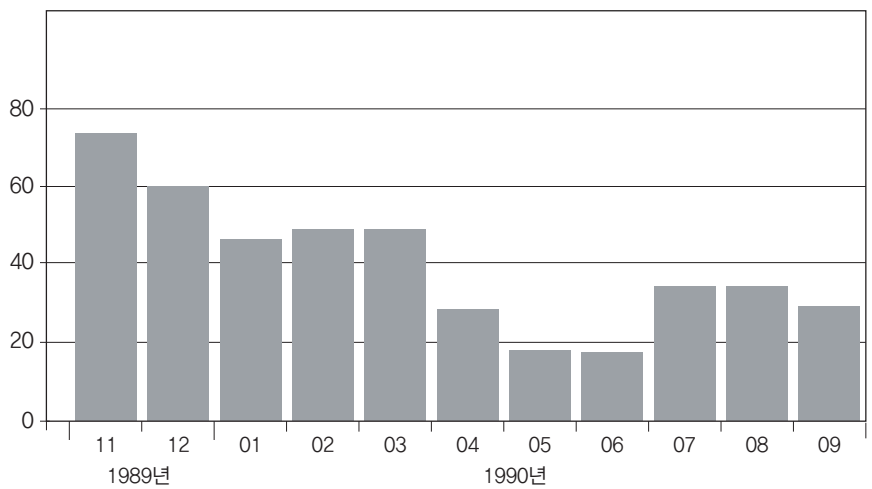


자 했으나 실현될 수 없었다. 그 밖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의 전반적인 제한도 거론되었으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독인의 서독국적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행렬은 화폐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이 체결되면서 반감되었다(〈그림 1-1〉 참조). 그러다가 화폐통합이 발효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주행렬은 배증되었다. 이 이주행렬은 화폐통합 이전과는 달리 동독기업의 줄도산에 따른 실업과 불완전고용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림 1-1) 동독주민의 이주행렬(1989-1990년)

(단위 : 천 명)



출처: 동독통계청; 신연방주 공동통계청

제2절 화폐통합 논란

화폐통합에 대해서는 동서독의 협상과정에서만 아니라 정치적 통일이 완성된 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화폐통합에 관한 제안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콜 수상의 제안이 발표되었을 때 서독 연방은행 쾰른 총재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도 동독의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화폐통합으로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서독에서 진행된 화폐통합 계획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단계적 접근을 주장했다. 통일조약 서명 당사자인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도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일조약을 ‘정치적 급살’이라고 비판했다. 당시에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자문교수단인 전문가위원회(Sachverständigenrat; 소위 ‘5현자’)가 1990년 2월 발표한 공개서한이었다. 여기에서 ‘5현자’는 보조금 지급을 수반하는 계획경제적 가격시스템의 해체를 먼저 단행할 것, 재화부족으로 누적되고 있는 과잉구매력을 해소할 것, 시장경제 조건에 부합되는 금융시스템을 갖출 것, 국영기업 민영화를 포함하는 여타 개혁들을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Sachverständigenrat 1990). 동독 마르크에 대해서는 일단 고정환율제를 적용하고 점진적이지 가능한 한 조속히 태환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화폐통합을 시행하면 서독에 비해 낮은 소득이 두드러질 것이므로 과도한 임금인상 과정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그 까닭은 화폐통합과 함께 동독인들이 서독의 생활수준에 조속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도 마찬가지로 동독의 독자성과 독자적 화폐에 찬성했다. 동독 마르크 환율은 서독 마르크에 연계시키되 동독 마르크 가치는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Flassbeck/Hoffmann/Pohl 1990). 그렇게 해야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시급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독 마르크 태환성은 개혁과정의 마지막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한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가연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계에도 조속한 화폐통합을 찬성하는 학자도 일부 있었다. 가령 빌게로트는 화폐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이 통일을 위한 충분한 질서정책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Willgeroth 1990).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 발권



에 의한 국가재정의 확대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서독 마르크에 기초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가격신호가 보내질 것이고 투자자들은 환위험이나 태환성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는 다시 이자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화폐가 태환인지 불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경우든 가격과 소득이 생산성에 상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폐통합을 하지 않으면 과도한 임금인상이 발생할 때 커다란 평가절하가 발생할 것이다. 그에 따른 수입가격 인상은 국내물가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실질임금이 조정될 것이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 과도한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통해 구매력의 유출을 초래할 것이다. 수요 감소와 실업 증가가 명목임금의 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화폐통합은 통일 4반세기가 지나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화폐통합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분명한 것은 통합 당시에 '이상적인 방안'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일찌감치 '독일화폐경제사회동맹' 10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보고서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평가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실린 9개 논문의 결론은 비록 통일이 정치적으로는 성공이었을지라도 10년이 지나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통일의 역사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에 대해서는 종종 높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모범사례'였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처음부터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일과정을 비판적으로 동반했지만 당시 콜 수상이 강제했던 '정치적 상징'이 경제적 이성을 제압했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오류'였다는 주장이 이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다. 화폐통합이 달리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경제상황의 적응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유럽화폐동맹의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마르크의 과도한 평가절상'이 세계시장에서 동독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양면적이다. 즉 동독의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할 때 교환비

율은 1:4가 적절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화폐통합 이후 구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이 지연되자 학자들은 통일에 따르는 적응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서독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구동독에게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절 화폐통합의 정치적 선택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당시 동독 지도부 내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인식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발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비록 조심스러웠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가령 1990년 1월에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허용되는 공동기업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영업의 자유를 완전하게 인정하려는 방침이 예고되었다. 3월로 예정된 인민의회 선거에 앞서서 ‘중앙은행개혁법’이 통과되어 4월 1일부터 서구식의 2단계 은행시스템으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동독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거나 이주민 수를 줄이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1990년의 이주물결은 동독의 청년과 숙련인력의 유출을 의미했기 때문에 흐름이 계속된다면 1년 후 동독경제는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동독인들은 화폐통합을 열렬히 지지했다. 동독인들이 서독 마르크를 갈망한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 번영과 높은 생활수준을 연상시켰을뿐만 아니라 동독 마르크를 소지했을 때 경험했던 굴욕감도 한 몫 했다. 동독 마르크는 동유럽 다른 나라들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동서독 국경상점에서 생필품임에도 서독 마르크가 없어 사지 못했기 때문에 느꼈던 굴욕감을 그들은 잊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위 현장에서는 “서독 마르크가 오면 우리는 머물 것이다.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에게 갈 것이다”는 구호가



보였다.

정치인들에 대한 압력이 강해졌다. 당시 연방재무부 화폐신용국장이던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가 티로 자라친(Thilo Sarrazin)에게 화폐통합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다. 자라친은 1월 29일 ‘서독 마르크 통화권으로의 동독의 편입에 관한 착상’에 관한 14쪽짜리 메모를 작성했다. 이를 쾰러와 자라친은 콜 수상에게 보고했고 콜은 2월 6일 화폐통합에 관해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했다. “우리는 화폐통합의 조속한 실현을 이주자 물결을 정지시키기 위한 잘못된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경제5현자의 호소도 소용없었다. 이미 콜 수상은 결심한 상태였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나는 이 길이 지금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콜 수상은 동독 모드로우 총리에게 ‘혁명적인 사건에 대한 혁명적인 답변’으로서 화폐통합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했다. 콜의 제안은 동독은 물론 서독에서도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서독은 예산의 약탈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고 동독은 경제적 붕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독연방은행 펄 총재마저 기겁을 했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 도입함으로써 동독이 가진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화폐통합이 실현되자 펄 총재는 사임했다.

화폐통합의 예고는 1990년 3월 중순 동독 선거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서독 기민당의 자매정당인 동독 기민당과 그 연립정당이 압승했던 것이다. 서독 마르크가 선택되었고 ‘독자적인 동독’ 제안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주민 행렬은 인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연합’이 승리해서 동독이 서독과의 신속한 통일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는 경제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비로소 잦아들었다. 1990년 4월 18,100명이었던 이주민 수는 5월에 11,9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선거 결과로 나타난 동독주민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독정

부는 동독 드 메지에르 정부와 화폐통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현시키기
로 합의했다. 이때 동독에 서독 마르크를 신속하게 도입할 때 발생하는 정치
적 장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점도 같이 부각되었던 것은 사실
이다(Deutsche Bank 1990).

- 서독 마르크를 소지한 동독인들은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 동독경제가
자유화되면 경쟁체제가 갖추어짐과 동시에 동독인의 노동의욕이 되살
아나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질 것이다.
- 서독 마르크가 도입되면 동독기업들은 즉각 완벽한 태환통화를 소비
할 수 있게 된다. 대외무역이 개방되면 이는 동독기업들에게 서독은 물론
다른 서구의 나라들로부터도 수많은 새로운 조달경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동독기업들은 계획경제 당시 생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국경이 개방되면서 더욱 심각해진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부 동독기업들은 필요한 중간재를 보다 저렴
하거나 품질이 좋은 상태로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단기
적으로는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화폐통합은 서독 자본이 동독으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화폐
통합이 없다면 잠재적 자본공급자, 특히 은행들에게는 여전히 ‘동독
리스크’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신용을 조달할 때 추가 금리를 부담
해야 하고 상환할 때 태환통화를 조달해야 할 것이다. 동독에 투자하
려는 서독기업도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 이윤을 송금할 때 환율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 무엇보다도 화폐통합은 동독에서 시장경제 개혁을 즉각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화폐통합과 함께 경제통합이 이
루어지면 일종의 ‘충격요법’을 통해 경제질서의 개혁도 달성할 수 있다.
서로 적대적인 두 개의 경제질서를 하나의 통화로 연결한다면 그 결과
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동독중앙은행의 부총재였던 에드가 모스트(Edgar Most)는 1990년 4월에 본에서 개최된 독일은행총회에서 콜 총리 옆좌석에 앉아 동독중앙은행의 비밀자료까지 동원해서 교환비율에 대해 재고할 것을 설득했으나 실패했다고 회고했다(“20 Jahre deutsch-deutsche Währungsunion”, Spiegel 2010년 7월 1일자). 그는 “당신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음에 서명했다. 당신은 동독의 가치를 모른다. 아직 교정할 시간이 있다”고 설득을 시도했다. 하지만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콜 총리가 한 말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모스트씨, 나는 정치인이고 정치적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경제학자이고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동독중앙은행은 경과규정을 가지고 화폐통합을 훨씬 늦게 현실화하려는 자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콜 총리 혼자서 결정했고 언론에 발표했다.

화폐통합에 관한 저작권은 콜 수상에게 있지 않다. 1990년 1월 중순에 이주행렬을 멈추게 하기 위한 화폐통합에 관한 최초의 제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독일 사민당 소속 연방의원이었던 잉그리드 마테우스-마이어가 1990년 1월 19일자 ‘디 차이트’에 기고한 글 ‘머물기 위한 신호’에서 경제화폐통합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 콜 수상마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는 소문이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들도 동독경제의 점진적인 개혁을 말했고 과도기 동안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유효기간이 짧았다.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민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서독은 이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

5월 18일 서독 재무장관 테오 바이겔과 동독 재무장관 발터 롬베르크는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유로화 도입에는 수년 간의 준비 작업이 필요했던 데 비해 동서독 화폐통합은 콜 수상이 2월에 선언하고 7월 1일 실행될 때까지 4개월 남짓 걸렸다. 화폐통합이 없었더라면 통일도 그리 빨리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화폐통합 후 불과 3개월 만에 독일인들은 통일을 자축했다.

당초 서독정부는 ‘화폐경제동맹’을 제안했으나 동독측 협상파트너인 귄터 크라우제(Günther Krause) 차관의 요구에 의해 ‘사회동맹’이 확대되었다.

제4절 화폐교환비율의 결정

독일연방은행 엔스 바이데만(Jens Weidmann) 총재에 따르면 동서독 화폐통합에서는 ‘마의 사각지대’와 같은 목표가 추구되었다. 첫째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서독상품에 대한 동독인들의 대기수요와 화폐통합 직후 한꺼번에 증가할 통화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연방은행은 이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이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화폐통합과 동시에 동독시장이 서독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개방되었던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동독시장에서 재화공급은 급증했지만 동독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했다. 둘째로, 동독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해되어서는 안된다. 1:1이든 2:1이든 동독기업들에게는 대대적인 평가절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통합이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화폐통합 후 동독기업의 줄도산에는 평가절상이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셋째, 공공재정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주민을 위한 연금과 동독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 대폭 지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콜 수상이 호언했던 ‘우편요금’ 만큼의 통일비용은 허황된 꿈이었다. 2015년까지 통일비용이 2조 유로까지 추정되기도 했다. 넷째, 동독주민의 구매력(저축)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시적이었고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동독기업의 줄도산으로 실업과 불안전고용이 급증하면서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화폐통합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와 협상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비율로 동독 마르크



가 서독 마르크와 교환되어야 하는가였다.

동독주민들은 당연히 1:1을 요구했다. 1:2를 권고하는 연방은행의 보고서가 알려지자 동독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1:1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동베를린 시위대는 외쳤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동독기업들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고 경쟁력을 잃고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1:6의 교환비율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었다. 동독중앙은행의 부총재였던 모스트도 1:1 교환비율은 ‘경제적 자살’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경제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은 동독주민의 저축자산 1,660억 동독 마르크가 어떻게 교환되느냐가 아니라 이 교환비율로 인해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산정되어 하룻밤 사이에 기업들이 대부분 지불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모스트는 1:7의 교환비율이 적절했을 것으로 주장했다. 장벽 붕괴 후 암시장에서는 1:10까지 갔었다. 그랬더라면 민영화도 전혀 다르게 진전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른 교환비율을 적용했을지라도 동독기업과 제품은 구제불능으로 낙후되어 있었다는 비난에 대해서 모스트는 그것이 ‘전형적인 승자의 설명’이라고 반박한다. 신탁청은 먼저 대부분의 기업을 회생시킨 다음 자본시장을 통해 민영화했어야 했다고 한다. 실제로 초대 신탁청장이었던 데트레프 로베더(Detlev Rowedder)는 동독기업의 70-80%는 구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동독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 부채 때문에 결국 몰락했는데 여기에서 교환비율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권장환율은 1:5였다. 동독 마르크 환율은 서독 마르크에 연계시키되 동독 마르크 가치는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시급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Flassbeck/Hoffmann/Pohl 1990).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성적이었을지라도 정치적으로 관철될 수 없었다.

동독정부도 1:1에서 벗어나는 비율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환비율을 결정하면서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했다. 첫째는 특히 서독 연방은행 쪽에서 화폐가치 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동독주민의 대기 수요로 인해 구매열기가 촉발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환율이 가령 1:1이 되면 사실상의 평가절상이 초래되어 동독기업이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로써 동독경제의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신뢰할만한 답변은 찾을 수 없었다. 서독 연방정부는 서독 수준의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고(Ludewig 2015) 동독에서는 크렌츠 정부 하에서 작성된 동독경제 실상에 관한 보고서에서 서독 수준의 40%로 추정되기도 했다.

화폐교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히 국가조약 제1부속서에 정해져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990년 5월에 유효한 단체협상에 의거한 임금과 급여는 1:1의 비율로 교환된다. 장학금, 생활비, 방세 및 임대료와 여타 반복적인 지불도 그러하다. 생명보험과 민간연금보험에 대한 납입금과 급여는 예외로서 2:1로 교환된다.
- 연금도 원칙적으로 1:1의 비율로 교환된다. 그렇지만 사회동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조약 20조에 따라 연금은 인상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독의 연금 수준이 낮고(1989년에 의무보험에서는 최소연금이 330 동독 마르크, 최고연금이 510 동독 마르크, 평균연금이 450 동독 마르크였고, 자발적인 추가보험에서 평균연금은 100 동독 마르크) 서독 마르크가 도입되면서 물가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동독 마르크로 표시된 다른 모든 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2:1의 비율로 서독 마르크로 교환된다. 이는 대체로 동독에 주거지를 둔 자연인의 예금에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1976년 7월 1일 이후 탄생한 자연인은 2,000 동독 마르크까지, 1931년 7월 2일과 1976년 7월 1일 사이에 태



어난 자연인은 4,000 동독 마르크까지, 1931년 7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자연인은 6,000 마르크까지 1:1의 비율로 서독 마르크와 교환할 수 있다. 동독 비거주자가 동독에 계좌를 보유하면서 교환을 신청하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했던 예금은 2:1의 비율로, 1989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예금은 3:1의 비율로 교환된다.

- 교환은 원칙적으로 동독 금융기관에 보유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독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는 1990년 7월 1일자로 소위 차액보전청구권(Ausgleichsforderungen)이 기재되었다. 이로써 동독은행들의 부채는 1:1로 교환되는데 반해 자산은 1:2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괴리가 메워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차액보전청구권은 동독기업의 채권을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현실적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이다.

특정 은행에 배정된 차액보전청구권의 규모는 동시에 자기자본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적어도 정산금액의 4%에 달할 수 있도록 측정되어야 했다. 차액보전청구권은 화폐교환과 신용교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계산상 발생하는 200-250억 마르크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까닭은 동독의 금융기관들은 국가조약의 제1부속서에 의거하여 필요해진 자산재평가에서 상법상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산가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액보전청구권은 동독이 화폐교환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보전기금(Ausgleichsfonds)’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이다. 이 기금에는 다시 순채무 규모만큼 동독에 대한 채권이 배당되었다. 사실상 차액보전청구권은 (서독) 금융기관에 대한 동독 국가의 채무였다. 차액보전청구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후 3개월 프랑크푸르트 은행간시장(FIBOR) 3개월 금리에 따라 이자가 부과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는 매년 순가치의 2.5%씩 상환되어야 했다.

국가조약 10조 6항에 따라 동독 예금주에게는 2:1 비율로 교환된 저축 예금에 대한 보상으로서 미래의 시점에 국영기업 자산에 대한 지분기득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에서 임금, 연금 등에 대해서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독의 당시 임금 수준이 서독의 1/3 정도였기 때문에 서독 정부는 정당하다고 했다(Ludewig 2015).

제5절 화폐통합의 실행

1990년 7월 1일 약 1,850억 동독 마르크가 약 1,230억 서독 마르크(630억 유로 상당)로 교환되었다. 성인은 한 사람당 4,000 마르크, 연금수령자는 6,000 마르크, 어린이는 2,000 마르크를 1:1로 교환할 수 있었다.

화폐통합이 발효되기 직전인 6월 30일에는 동독인 1,600만 명이 개설한 2,470만 개의 계좌에서 동독 마르크가 서독 마르크로 전환되었다.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동독인들에게 서독 마르크를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지점뿐만 아니라 시장실, 학교까지도 이용되었다. 동독인들은 갈망했던 자동차, 신발, 가구 등을 구매했고 해외여행을 즐겼다.

서독 연방은행은 1990년 6월 30일에 약 4억 4,000만 장의 지폐와 1억 200만 개의 동전을 동독으로 운반했다. 약 280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의 현금이 구동독중앙은행의 15개 지점으로 일단 수송되었고 이들 지점에는 구동독중앙은행 직원들이 근무했다. 그리고 이들 지점은 동독 전역의 은행지점들에서 오는 화폐운송차량의 목적지가 되었다. 도로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을 위해서는 비행기를 동원하기도 했다. 동독중앙은행 지점에 '임시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실, 창구, 금고 등을 갖추었다. 동독 동전은 훗날 알루미늄 괴로 용해되었고 지폐는 폐기되기 위해 할버슈타트(Halberstadt) 근교에 있는 지하갱도로 운반되었다.



1990년 7월 1일 0시를 기해 도이치은행 알렉산더광장 지점이 문을 열었다. 기다리던 동독인들은 참을성을 잃고 창구로 밀려들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13명이 부상당했고 기절한 사람도 있었다. 정상적인 은행영업시간보다 일찍 0시에 창구가 열리면서 최초의 서독 마르크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면서 동독지역 내 모든 은행지점들이 문을 열었다. 은행직원이 헤치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6월 30일까지도 이미 ‘뱅크런’이 일어났다. 화폐통합 이전에 동독인들은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계좌에 맞추어 넣기 위해서 뱅크런을 했다. 은행 창구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려는 사람들로 1주일 동안 붐볐다.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이 발효되면서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막을 내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파산한 계획경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화폐운송작업은 화폐통합이라는 국가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은행직원들조차 경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화폐운송 경비는 허술했다. 은행지점의 업무차량이 동원되고 지점장이나 운전기사 혼자서 50만 내지 100만 마르크를 운송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통일독일의 행운이었다.

동독인들에게 서독 마르크는 복지의 약속이었고 현란한 상품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다. 그러나 열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치인들과 동독시민들이 신속한 화폐통합에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동독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기대했던 경제활성화는 오지 않았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지 4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구동독의 1인당 총생산은 구서독의 70%에 지나지 않는다. 실업자도 구서독에 비해 훨씬 많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서에서 동으로 2조 유로 가량의 지원이 흘러들어갔음에도 그러하다.

제6절 연방은행의 관할권 확대

서독 연방은행은 1990년 7월 1일자로 동독에서의 통화주권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연방은행은 통일된 통화지역에서 항구적으로 구매력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연방은행 및 신용제도에 관한 법’의 효력이 동독으로 확장되었다.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에 관한 결정적인 지표인 화폐공급에 관한 연방은행의 권한이 화폐통합으로 인해 결코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이 위태로워질 조짐이 보이면 연방은행은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다.

과도기일수록 통화정책상의 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동독의 생산잠재력의 장래 성장과 화폐의 유통속도에 관한 평가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장래 통화량과 중요한 통화량 변동에 관한 해석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일단 단기적인 조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로부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까닭은 원칙적으로 팽창적 방향으로뿐만 아니라 축소적인 방향으로도 예측불가능성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연방은행이 경기대응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동독에서의 화폐교환에 따르는 통화량효과가 연방은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통화량 M3(현금, 요구불예금, 4년 이하 정기예금, 법정해지시한이 있는 저축예금)가 화폐교환으로 인해 증가하는 정도가 12%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화폐통합 이전에는 사실상 저축예금이 유일한 투자형태로 존재했던 동독주민들이 변화된 환경에서는 연방공채, 저당채권, 저축증권과 같이 통화량으로 계산되지 않고 금리가 높은 투자형태로 대대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통화량 M3는 실제로는 약 10%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확대된 서



독 마르크 경제공간에서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 및 서비스 공급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의 국민총생산은 대략 서독 국내총생산의 10-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화폐교환이 오히려 신중한 전망에 기초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Deutsche Bank 1990).

연방은행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독중앙은행 영업소가 있던 자리에 베를린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여타 동독지역에서는 15개의 지점을 설치했다. 임시 관리사무소는 연방은행 이사회 직속으로 두었다. 여기에는 다시 동독정부가 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통화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독정부와의 밀접한 협력이 합의되었고, 그래서 동독의 담당 장관이 중앙은행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는 의결권도 제안권도 없었기 때문에 공동결정이나 공동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화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연방은행의 자율원칙에 변함이 없었다.

동독정부와의 재정적 관계는 서독에서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정부는 연방은행의 계좌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저축예금을 두어야 했고 단지 연방은행에서 최고 8억 서독 마르크의 신용을 인출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공채, 국고증권, 국고어음은 1차적으로 연방은행 자신에 의해서나 연방은행의 양해 하에서만 발행되어야 했다.

국가조약에서 동독의 재정적자의 한도를 규정한 것도 연방은행이 추구하는 안정목표를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동독정부의 차입은 서독 연방정부와의 협의 하에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동독에서도 서독에서와 동일한 통화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최저준비금 의무는 1990년 8월 1일부터 도입될 수 있었지만 동독에서는 할인정책, 공

개시장정책 등을 수행할 기반으로서 어음이나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앙은행화폐를 공급하기 위해서 동독에 소재하는 금융기관들에게는 총 250억 서독 마르크 규모의 리파이낸싱 할당액이 각자의 잔고에 따라 배정되었다. 이 할당액은 서독 금융기관들의 재할인 할당액(약 600억 서독 마르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동독 금융기관들은 일단 해당 자산이 없어 유가증권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독 금융기관들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되면 할당액은 그만큼 감축되어야 했다.

동독 금융기관의 재할인업무를 위해서는 일단 은행단독어음과 마찬가지로 3인 미만의 서명이 있는 어음만 허용되었다.

서독이나 서독에 주재하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지점에게는 동독 내 업무를 위해 별도의 리파이낸싱 가능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재할인 할당액의 차기 정례 정산에서 그들의 동독 내 활동이 잔고에 따라서 고려되었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후 수개월 동안은 연방은행이 동독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유연하게 활동해야 했다.

제7절 동독 은행제도 개혁

동독 은행제도는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조종되었던 은행제도를 대신해서 수익성과 위험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영업하면서 경쟁하는 은행들이 들어섰다. 국가조약에서 동독이 서독 은행법을 수용하기로 합의되면서 1990년 중반부터는 동서독에 사실상 은행업을 위해 동일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때부터 동독의 금융기관들은 서독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은행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에서의 은행감독은 서베를린에 있는 연방신용기관감독청의 권한



이 되었다.

모드로우 과도정부에서 이미 1990년 4월 1일에 2단계 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전에는 발권은행이자 시중은행으로 활동했던 중앙은행의 업무영역은 발권은행과 주립은행의 기능으로 제한되었다. 이 은행의 발권은행 업무는 다시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독일연방은행으로 이전되었다.

동독중앙은행(과 그의 지점망)의 시중은행 업무는 1990년 4월 1일자로 신설된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로 이관되었다. 동시에 ‘독일협동조합은행’이 ‘농업식량경제은행’의 법적인 후계자로서 탄생했다. ‘상공업협동조합금고’는 ‘국민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저축금고들은 이제부터 지자체의 후견 하에서 자립적인 기관들로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원칙적으로는 동독의 은행제도가 서독과 유사하게 갖추어졌다. 그렇지만 아직 광범한 민간은행부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외국은행들은 1990년 7월 1일부터 지점과 영업소를 동독에 설립하여 은행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서방은행, 특히 서독은행들이 1989년 11월 장벽 개방 이후 동독에 대리점이나 사무실을 개설했다. 당시에 이미 서독은행들은 동독 금융기관들과 합작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동독에 300개 이상의 사업장을 둘 계획을 세웠다. 한때 동독에 3,200개 이상의 은행 지점이 있어서 주민 5,000명당 1개의 지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많은 수는 아니었다. 서독에서는 주민 1,400명당 지점이 한군데 있다.

은행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직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서독의 은행, 저축금고, 협동조합은행은 화폐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각자의 협력파트너 동독은행의 직원들을 서독이나 현장에서 교육시켰다. 그 밖에 수많은 서독 전문인력이 일부는 과도기 동안만 동독으로 파견되었다.

민간기업에게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던 무렵에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보시스템과 보안체계가 부족했다. 시장경제가 도입되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국영기업에게 중앙은행이 제공한 위험한 신용에 대해서는 동독정부가 신탁청의 보증을 예고했다.

개인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에서는 저축과 소비자신용, 주택신용부문에 상당한 시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 독점이 무너지고 동독경제가 세계시장에 통합될수록 동독 은행업무에서 외환거래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동독은행들을 독일의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다. 가령 차액보전청구권을 넘어서 보증업무나 유가증권업무에도 은행의 리파이낸싱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화폐통합의 경제적 충격

처음 몇 주 동안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급격한 체제전환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볼 수 있었다. 경제동맹은 서독식의 사유재산, 경쟁,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해주었다. 즉각적인 화폐통합은 무엇보다도 동독인들에게 서독 마르크를 가져다주었고, 그럼으로써 갈망하던 서독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첫날에만 34억 마르크가 지급되었다. 그 뒤를 이어서 엄청난 구매열기가 나타났다. 이는 화폐통합 이전에 동독인들이 서독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소비를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가사용품, 여행 등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대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바빴다. 서독기업들은 판매와 이윤에서 기록을 크게 갱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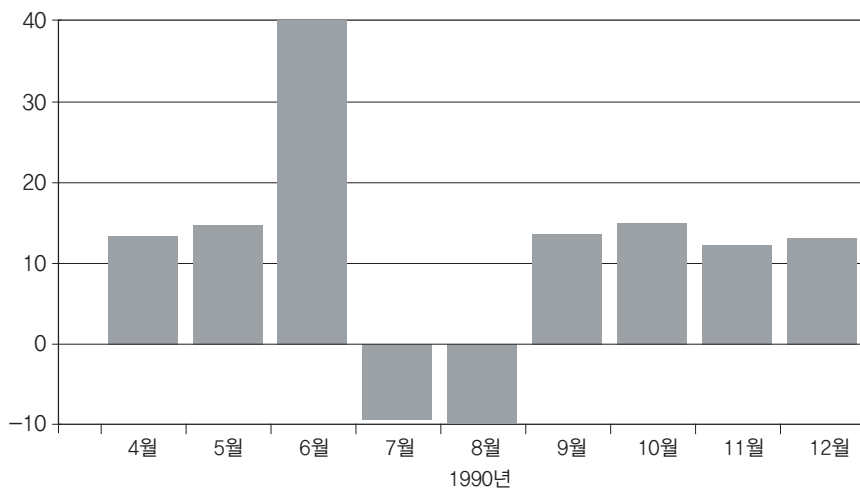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9월 들어 소비는 감소했고 저축률은 다시 증가했다(그림 1-2).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기 전 날인 6월 30일 동독 전 지역에서는 역설적인 ‘구매열기’가 타올랐다. 동독인들은 밀가루, 소금, 식용유, 화장지 등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으면서 서독 마르크를 주고 구매하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을 사재기했다. 반면에 가게들은 더 이상 동독제품을 주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처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들끼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동독기업의 줄도산을 초

래한 원인의 출발점이 되었다. 2기통 자동차 ‘트라비’에서부터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동독상품이 곧바로 판매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것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독 마르크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90억 동독 마르크 어치의 동독산 제품이 판매 불가능해졌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독상품이 팔리지 않은 것은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다. 화폐통합이라는 충격요법은 수많은 동독기업들에게는 사실상 급사를 의미했다. 화폐통합이 300-400% 평가절상과 같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동독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국내 매출은 물론 동구권 나라들로의 수출도 급감했다. 공급물품을 정비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납품업자 등에게는 서독 마르크로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했다.

동독은 순식간에 경제위기에 빠졌다.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졌고 실업자는 급증했다. 동독경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었다. 엘베강에서 오테르강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탈산업화되었다.

그림 1-2) 동독 근로자 가계저축률(두 자녀 가구)

(단위: 가계소득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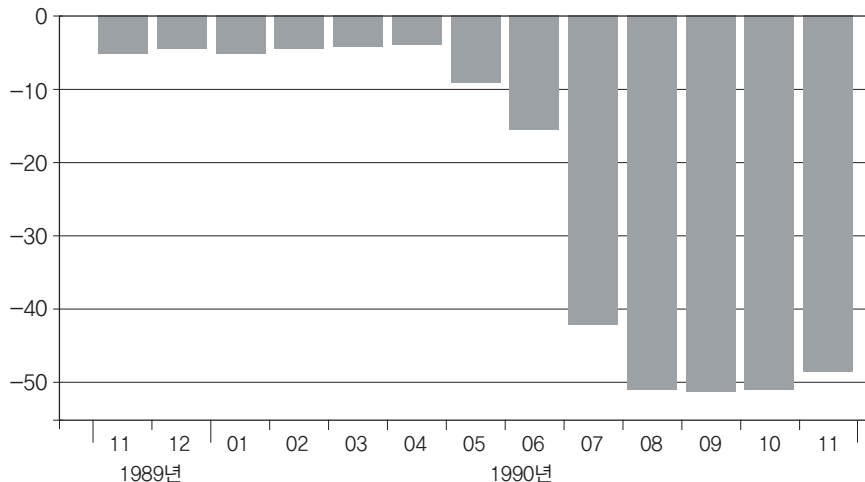
출처: Brenke(2015).



이는 화폐통합 이후 동독의 경제발전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그 까닭은 국제경쟁에 노출된 동독경제 부분은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산하는 기업이 줄을 이었고 산업생산이 불과 몇 주 만에 거의 반감되었기 때문이다(〈그림 1-3〉). 경제학자 울리히 부쉬(Ulrich Busch)는 화폐통합을 ‘동독경제에 투하된 중성자탄’에 비유했다. 노동조합에 친화적인 한스 뵉클러(Hans Böckler)재단 산하 거시경제연구소 구스타프 호른(Gustav Horn) 소장에 따르면 “화폐통합 후 6개월 동안 동독생산의 약 60%가 사라졌고, 그럼으로써 구동독에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불완전고용이 급증했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노동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할 일이 없어서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이 배정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동독지역 취업자의 거의 1/3이 1990년 말까지 일자리를 잃었다. 분위기가 반전되는 조짐도 나타났다. “서독사람들은 더 교활했다. 지금은 돈이 장벽이다.” 그 밖에 대대적인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1990년 말부터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긴급하게 착수된 직능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조기정년퇴직자도 적지 않았다. 취업 중인 연금생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고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노동시장통계에 포착되지도 않았다. 취업가능인구 980만 명 중에서 1990년 말에 약 300만 명이 실업자이거나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이 되거나 정년퇴직했다. 다음 해에는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기대되었던 지속적인 소비 열기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미래전망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림 1-3) 동독지역의 산업생산 변화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출처 : Brenke(2015)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대대적인 조업중단과 인력감축을 수반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화폐통합 이후 나타난 것과 같은 붕괴가 예상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붕괴의 원인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요 측면을 보자면, 당시에는 동독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체가 정치적, 경제적 변혁과정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동독제품에 대한 이들 나라의 수요가 급감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화폐통합 직후에 나타난 산업생산의 급격한 감소가 이에 기인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서독 연방정부는 동유럽 나라들과 무역하는 기업들에게 대대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면서 지원했다. 연방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후반기에 동유럽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거의 120억 청산루블에 이르는 흑자가 기록되었다. 따라서 동유럽 나라들과의 무역이 없었더라면 동독의 산업생산은 더 심하게 붕괴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독주민의 소비격감을 원인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독 마르크를 수중에 넣었기 때문에 동독주민들은 선호를 바꾸어 동독제품



보다 서독제품을 먼저 구매했다. 소비감소로 인한 생산감소는 동독 전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교환비율이 당시 동독의 생산성 수준에 부합되지 않았을 것이다. 화폐통합을 전후해서 동서독 사이의 생산성 격차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추정치의 편차는 매우 크다. 생산성이 서독의 절반에서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Brenke 2015). 생산성 격차는 부문별로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서비스부문에서의 격차가 공업에서보다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통합을 하면서 생산성 격차를 고려한다면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주장했듯이 4.3:1의 비율이 적용된다면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수출하는 동독기업은 4.3배의 평가절상에 직면하는 것과 같다.

잘못된 임금정책도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권은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생활수준의 균등화를 지향했고, 노동조합은 자국 내에 저임금지역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간과되고 있던 사실의 하나는 화폐통합 이전에 이미 상당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1990년 2/4분기에 동독에서는 1/4분기보다 임금이 11% 높았으며 그 이전에도 임금은 인상되었다. 임금인상 원인으로는 소비재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1989년 6월부터 1990년 6월 사이에 하락했다. 기업들이 재고를 방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물가상승을 가정해서 임금을 인상한 것은 부분적인 가격상승을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renke 2015).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화폐통합과 함께 비로소 왔다. 부분적으로는 소비수요의 급증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가격왜곡이 부분적으로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던 생필품 가격이 1990년 7월에 크게 올랐다. 집세는 특히 1991년에 대폭 올랐다. 그러나 화폐통합 이전의 임금인상은 급속한 임금인상의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화폐통합 이

후의 시기에 대한 임금인상이 미리 합의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금속노조 연맹은 금속전자산업에서 7월 1일부로 일괄적인 1인당 250 마르크의 임금인상과 10월 1일부로 300 마르크 인상을 관철했다. 이로써 금속전자산업과 같은 중요한 부문에서는 10월 초까지 임금이 40% 이상 상승했다. 이는 산업생산의 감소를 더욱 부채질했을 것이다. 1990년 가을부터 단체협상은 독일 전체를 관장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의 권한에 속하게 되었다. 1991년 봄에는 금속전자산업에 대해서 1994년 4월까지 임금을 완전히 서독 수준에 접근시키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지켜질 수 없게 되었다. 사용자협회가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자협회를 탈퇴했고 민영화되거나 새로 창업된 많은 기업들이 임금정책 때문에 협회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았다. 나아가 금속산업 사용자협회는 1993년 서독 임금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계획을 해지했다. 경제 전반에서 임금인상은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1995년까지 임금은 소비자물가보다 많이 올랐다. 1992년까지는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아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는 상황도 있었다. 대부분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서독정부도 화폐통합을 준비하면서 기업 줄도산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과 수일 만에 화폐통합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당시 연방 재무부 팀로 자라친(Thilo Sarrazin) 국장에 따르면 동독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동독경제의 성장과 민간자본으로 조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솔하게 기대했다. 치명적인 오류였다.

화폐통합의 이러한 손실은 동독경제 건설에 소요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때문에 잊혀졌다. 동독지역에 매년 수백억 유로의 이전지출을 가져다주는 연대협약 II는 2019년까지 발효 중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동독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추진되었던 신속한 통일을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독일 전 국민이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 결과 구서독에서 구동독으로 오늘날까지 2조 유로의 방대한 이전지출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계획경제에서 단지 계산단위에 불과했던 기업의 채무가 화폐통합과 더불어 시장경제에서의 대출로 전환되면서 시장에서 통상적인 조건에 따라 상환되어야 했다. 이로 인한 구동독기업들의 부담은 결국 이들을 도산으로 몰아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6장

화폐통합의 부작용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나 이루어지고 난 다음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다. 화폐통합은 대리인(Strohman), 외환밀수꾼, 투기세력에게 축제의 자리였다.

제1절 뱅크런

7월 1일 화폐통합이 발효되자 동독인들은 서로 서독 마르크를 손에 쥐기 위해서 은행이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는 은행 문이 밀쳐지고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렇지만 교환되는 동독 마르크의 금액이 제한되자 불공정한 행위가 자행되었다. 동독 마르크 예금을 가지지 않거나 적은 사람이 초과예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담합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동독 마르크를 건네주고 화폐통합과 함께 서독 마르크로 환전해서 건네주거나 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서독 암시장에서 동독 마르크를 새삼 매입해서 계좌에 입금하는 사례도 많았다. 1990년 7월 1일 발효되는 조약이 1990년 5월 14일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동독주민들은 조약이 발효되는 7월 1일까지 새로운 계



좌를 개설하여 자신들의 예금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말하자면 화폐통합 이전에 이미 동독인들은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계좌에 맞추어 넣기 위해서 뱅크런을 했다. 은행 창구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려는 사람들로 1주일 동안 붐볐다.

모든 동독주민은 계좌를 전환하면서 예금이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했지만 점검은 거의 없었다. 서독을 방문해서 동독 마르크를 암시장에서 저렴하게 매입해서 동독으로 불법 밀반입한 사람들은 7월 1일이 지나면서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불법 밀반입에 공범인 서독인도 적지 않았다.

제2절 외환 스캔들

사회질서가 다른 사회질서로 대체될 때면 언제나 사기꾼, 노름꾼, 횡령꾼, 투기꾼들이 날뛴다. 특히 화폐통합의 이행과 국가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독일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동서독이 통합되면서 경제범죄자들에게는 활동공간이 넓어진 셈이다. 1990년 10월 구동독 및 코메콘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슈테른 푸블릭(Stern Publik)'이 벌인 사기행각은 단적인 사례이다(Christ 1990). 사기꾼들이 동독에서 코메콘 국가들로 불법 수출한 금액은 검찰이 1990년 10월 밝혀낸 금액만도 3억 7,500만 마르크에 달한다. 그중 2억 4,900만 마르크는 은행계좌와 현금으로 압수되었다. 총 사기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 마르크로 추정되었다. 가담자 수도 그 당시 체포된 4명보다 많을 것으로 베를린 경찰은 추정하고 있었다.

연방 검경은 이러한 사기꾼들을 수사하면서 소련과 폴란드 당국의 협조에 의존했다. 동서독 사기꾼들의 많은 불법거래들이 이들 나라에서 정산되고 공범들도 이들 두 나라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의 체제전환으로 이들 범죄자들에게는 새로운 조건이 조성되었다. 동독을 포함한 코메콘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무역은 각국의 통화가 자유롭게 태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루블이라는 가상통화로 일단 결제되었다. 각국의 수출기업은 수출을 통해 얻게된 청산루블표시 금액을 고정환율에 따라서 자국 통화로 지급받았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7월 1일까지 동독에서도 그러했다. 수출을 통해 얻어진 1 청산루블에 대해 동독 수출업자는 4.67 동독 마르크를 받고 있었는데 화폐통합과 더불어 2.34 서독 마르크로 환산되었다. 이 환율은 당시 모스크바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청산루블의 교환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1 청산루블이 0.2-0.3 서독 마르크로 거래되고 있었다. 사기꾼들은 2 마르크가 넘는 이 차액에 착안했다. 사기꾼들은 대외무역은행에 있는 계좌로 청산루블을 이체받기만 하면 되었다. 합법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국가가 승인한 수출대금을 이체 받는 길밖에 없었다.

구동독체제 하에서는 청산루블에 대해 동독 마르크만 지불되었기 때문에 수출이 그다지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었고, 따라서 통제가 느슨했다. 화폐통합 이후에도 잠시 통제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은 있지도 않은 수출을 6월 30일 이전에 허가된 수출로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공범들에게 수출선수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동독 대외무역은행 부행장이었던 존 프리드마르(John Friedmar)는 “이미 6월에 새로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외무역은행은 중앙은행에 계좌로 공급증명이 없는 청산루블이 계좌로 이체되고 있음을 이미 6월에 보고했다고 한다. 중앙은행은 다시 동독 경제부에 이러한 의혹을 보고했다. 중앙은행 이사였던 볼프-디터 베링(Wolf-Dieter Behring)에 따르면 “경제부는 이 업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경제부에는 수출업무를 통제하기 위해서 대외무역국이 있다.”

10월 16일이 되어서 연방경제부 산하 연방경제국이 연방관보에 ‘코메콘 제국과의 수출거래 및 그와 관련된 서류교환 및 지불거래의 결제에 관한 공고’를 게재하였다. 사기꾼들은 석 달 반 동안 큰 노력 들이지 않고 느슨한



통제와 모호한 관할을 악용했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화폐통합이 이루어져 동독이 코메콘 나라들과 행하던 무역이 혼란에 빠진 사실이 작용했다. 1990년 말까지는 상호 상품공급에 관한 의정서가 유효했지만 적지 않은 동독기업들이 이미 합의된 수입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코메콘 국가에서 수입한 기계, 차량, 중간재로는 품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독기업들의 대코메콘 수입이 격감했다. 동독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었던 소련으로부터의 수입만도 1990년 전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7% 이상 감소했다. 이는 동독의 겨울이 따뜻하기도 했지만 소련측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천연가스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동독기업들은 코메콘 회원국들에게 계획대로 공급했다. 이들에게는 유리한 청산루블 교환비율 덕분에 수익성이 매우 좋은 수출이었다. 그렇지만 코메콘 국가들의 대동독 무역수지는 이 불균형 때문에 편향되어 있었다. 소련과의 무역에서 동독은 1990년 초부터 화폐통합 때까지 97억 동독마르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 흑자는 다시 57억 마르크 증가했다. 다른 코메콘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10월 중순에 폴란드는 동독과의 무역에서 12억 마르크, 체코슬로바키아는 10억 마르크, 루마니아는 8억 마르크, 헝가리, 불가리아, 쿠바는 각각 6억 마르크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들 적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청산루블로 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측정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는 1루블당 2.34 마르크라는 비율을 그대로 수용했다. 통일조약에서 동독의 파트너와의 경제관계에서의 '신뢰보호'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메콘 국가들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동독기업들에게는 이 교환비율이 생존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시에 코메콘 나라들도 동독의 거래선으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코메콘 국가들은 서독 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독일통일의 조건으로 소련이 제시한 '이전조약'을 소련과 협상하면서 화폐통합 후 5년 동안에는 '과도한 추가적인 재정

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통일독일에게는 화폐통합에 따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사기

동독은행들에서는 범죄자들이 은행원들의 경험부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표사기는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계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수표도 입금했다가 정상적으로 1주일 기다렸다가 출금하기를 몇 회 반복해 은행직원들과 안면을 익히고 나면 입금한 수표를 미리 출금하려 하곤 했다. 그래서 지급하고 나면 부도난 수표도 있었다고 한다.

서독 마르크가 도입되면서 불투명한 거래가 시도되기도 했다. 동독인들을 상대로 바가지 상흔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청산루블 표시 수표를 마르크 표시 수표처럼 입금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로 인한 손실이 수십억 마르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만 되고 있다.

제4절 도난

화폐통합으로 폐기처분되어야 할 약 1,000억 동독 마르크의 액면가를 가지는 약 6,200만 장의 동독 마르크 지폐가 지하갱도에 묻혔다. 하지만 보안이 철저하지 않아 도난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번도 실제로 유통된 적이 없는 200 마르크, 500 마르크 지폐를 포함해서 인터넷에서 골동품처럼 거래되고 있는 동독 화폐 일부는 이들 도난당한 화폐일 가능성이 있다.

‘말라히트’라 불리는 이 갱도는 1944년 8월부터 수용소 수감자와 강제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장소였다. 나치는 이곳에서 공습을 피하면서 비행기 등 전쟁무기를 생산했다. 종전과 함께 4,000명의 사망자를 남기면서 이곳은 폐쇄되었다.



당초 이 갱도에 대한 경비를 독일연방군이 담당했을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1999년 한 변호사에게 매각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해부터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 점차 많은 신권 동독화폐들이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지하갱도에 큰 구멍이 나 있어 절도범들이 드나들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두 명의 청년이 두 자루 가득한 지폐를 들고 나온 절도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밝혀졌다. 2011년에는 할버슈테트의 한 주택에서 경찰이 우연히 10만 동독 마르크를 발견하기도 했다. 지폐는 부식된 것이 아니라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장소에서 보존되고 있었다. 동독중앙은행을 인수한 재건신용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은 마침내 니더작센주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지폐를 소각시켰다. 그러나 이 조치는 너무 늦게 취해져 이미 대량의 동독 지폐가 이베이 등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

제5절 은행의 부당이익

화폐통합을 둘러싸고 발생한 최악의 스캔들은 서독은행들이 동독은행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현한 대규모 부당이익일 것이다. 이에 관한 연방 감사원의 ‘구동독의 구채무청산과 동독 금융기관의 업무인수에 관한 보고서’는 ‘극비’로 분류되어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 이유는 동독은행 매각가격의 공개는 주식법 제395조와 신용제도법 제9조에 따른 침묵의무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보고서를 ‘극비’로 분류했다는 것은 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보고서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내용은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를 통해서 여론에 공개되었다. 그 까닭은 일부 위원들에게는 이 스캔들을 밝혀내는 것이 서독은행들의 모호한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예산위원회의 한 위원의 용기 덕분에 이 보고서가 논문을 작

성하는 데 제공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일로나 비젠얀(Ilona Wiesenjahn)이 ‘동독은행제도의 인수-서독 대형은행을 위한 수십억 거래’라는 제목의 석사논문으로 정리했고 학술지에 발표했다.

화폐통합 직전에 동독에는 서독에서와 같은 2단계 은행체제가 도입되었다. 동독중앙은행은 서독연방은행과 마찬가지로 발권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었다. 통일조약이 실행되고 동독은행들이 정산되면 연방은행이 동서독 전체의 중앙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화폐통합 이후 소위 ‘구청구권’은 총 1,775억 서독 마르크로 산정되었다.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독은행들이 동독은행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되어 동독기업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어 파산에 이르게 했고 연방정부 재정에도 커다란 부담을 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통합을 계기로 서독은행들이 동독기업이나 경제, 나아가 통일정부의 재정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실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했다.

1. 가장 큰 규모의 부당이익은 구동독은행들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보유한 ‘구채무청구권’이 매각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고스란히 인수은행의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했다. 동독은행을 인수한 서독은행들은 동독기업에게 채권자로서 나서서 소위 대출의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을 요구했다. 베를린시립은행주식회사(Berliner Stadtbank AG), 베를린협동조합은행(Genossenschaftsbank Berlin), 독일대외무역은행주식회사(Deutsche Aus-senhandelsbank AG), 독일상업은행주식회사(Deutsche Handelsbank AG)는 서독은행들에게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었다. 무엇보다도 동독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십억 마르크의 구채무청구권이 매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베를린은행주식회사는 동독중앙은행에서 전환된 베를린시립은행주식회사를 4,900만 마르크에 매입함으로써 115억 마르크의 구채무



청구권(Altschuldenforderungen)을 인수했다. 매각이 실패할 경우에는 베를린시립은행주식회사가 1억 1,500만 마르크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계약되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은 사실상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베를린협동조합은행은 1990년 4월 1일 동독 농업식량경제은행의 후신으로 설립되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협동조합은행이 이 은행을 1억 2,000만 마르크에 매입함으로써 동독은행의 구채무청구권 155억 마르크가 같이 인수되었다. 이 청구권에 대한 이자만도 매매가격의 몇 배에 이르렀다. 연방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막대한 구채무청구권의 인수가 매입 가격에 포함되었어야 했다. 연방감사원의 견해에 따르면 매입은행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전취득 없이 위험을 떠안지 않으면서 신용사업을 인수할 수 있었고 고객에 대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독일대외무역은행주식회사(DABA)는 화폐통합조약 체결 이전인 1990년 5월에 이루어진 서독주립은행대체센터(WestLB)와 합작투자연구소 ‘독일상공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1991년 1월 9일 연방재무부, DABA, WestLB는 사업처리계약을 체결하여 WestLB가 ‘구채권’의 청산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밖에 사업처리계약에는 WestLB가 DABA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WestLB는 1994년 12월에 DABA를 4억 3,000만 마르크에 인수했다. 이 인수와 함께 구채무청구권 70억 마르크도 매입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채 WestLB에 넘어갔다. 연방감사원은 연방재무부가 DABA 매각 이전에 WestLB의 주식매입옵션의 행사를 승인함으로써 다른 제안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차단한 사실을 비판했다.

독일상업은행주식회사(DHB)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매각되었다. 그 이유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중앙은행이 64%, 신탁청 소유로 넘어간 옛 국영기업이 30%, 독일보험주식회사와 독일해외재보험주식회사가 6%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구동독중앙은행의 지분이 먼저 공익

경제은행(Bank für Gemeinwirtschaft: BfG)에 2억 2,528만 마르크에 매각되었다. 아울러 65억 마르크에 달하는 구채무청구권도 BfG에 양도되었다.

이처럼 동독은행들이 약 9억 마르크의 가격에 양도된 구채무청구권의 가치는 약 430억 마르크에 달했다는 것이 연방감사원의 조사결과이다.

2. 서독의 인수은행들은 구채무청구권에 대한 이자지불에서 이중, 삼중의 혜택을 받았다. 연방감사원은 서독은행들이 구채무청구권을 무상으로 취득했을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부채에 대해서는 보증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취득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독은행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상속부채상환기금(Erblastentilgungsfonds)에서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연방감사원은 서독은행들이 구채무청구권에 대하여 차액보전청구권으로 전환된 다음에 이중으로, 한번은 신탁청으로부터, 다른 한번은 채권정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훗날의 상속부채상환기금)으로부터 이자를 지불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원채무자도 이자를 지불했다면 3중의 이자지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이익은 반환되지 않는다. 더욱이 연방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연방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은행들에게는 신탁청을 통해서 수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이자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아울러 연방감사원은 은행들이 신탁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가 어떤 구채무청구권에 대한 것인지 특정하지도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방감사원은 서독의 인수은행들이 상속부채상환기금에 대한 부당한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 받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저지한 경우도 있었다. 연방정부 또는 연방재무부 비호 하에 저질러진 이러한 ‘세금셀프서비스(Steuerselbstbedienung)’ 사례에서는 은행들에게 120억 마르크가 상속부채상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회계사가 저지할 수 있었다. 이 금액은 회계



사가 부당하다고 분류한 차액보전청구권(Ausgleichsforderungen)으로 이루어진 금액이다.

3. 서독의 인수은행들은 동독은행들에게 업무지원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갔으며 합작연구소 매매협상에서 협상상대에 압력을 가했다.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Deutsche Kreditbank AG: DKB)는 1990년 6월 20일 드레스덴은행주식회사와 공동신용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 7월 1일부터 드레스덴은행신용은행주식회사(Dresdner Bank Kreditbank AG)라는 상호로 드레스덴은행의 영업지도를 받으면서 DKB 지점들에서 활동하기로 예정되었다. 도이치은행과도 도이치은행신용은행주식회사(Deutsche Bank Kreditbank AG)라는 상호로 합작연구소를 설립했다. DKB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구채무청구권은 신설된 신용연구소들에 이전되지 않고 업무지원계약에 의거하여 합작투자연구소에 의해서 정산되었다. 그에 따라 도이치은행신용은행주식회사가 890억 마르크의 구채무청구권을, 드레스덴은행신용은행주식회사가 약 360억 마르크의 구채무청구권을 맡았다. DKB는 이러한 업무지원에 대해 도이치은행에 2억 9,700만 마르크, 드레스덴은행에 1억 2,500만 마르크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연방감사원의 의견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너무 높았다. DKB는 1991년 11월 4일 이 업무지원계약을 해지했다.

DKB가 합작투자연구소에 가지고 있던 지분은 드레스덴은행(1991년 3월)에 3억 1,000만 마르크, 도이치은행(1990년 12월)에 1억 1,300만 마르크에 양도되었다. 그러나 DKB가 이들에게 구채무청구권의 관리 및 정산에 대해 지불한 수수료를 이 매각가격에 합산하면 서독은행들은 DKB를 공짜로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연방감사원은 DKB, 도이치은행주식회사, 드레스덴은행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부정행위를 확인했다. 연방감사원에 따르면 두 서독은행이 설립한 합작기업인 '도이치은행신용은행'과 '드레스덴은행신용은행'은 매매협상에서 협박까지 확인되었다. 가령 연

방재무부 메모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DKB 협상대표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4. 새로운 채권자들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청구권을 획득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화폐통합 이후에는 가치가 없어야 하는 청구권을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화폐통합에서 차액보전청구권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조약 제1부속서 4조 X항 6호에 의거하여 신탁청과 연방정부가 절반씩 차액보전청구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채권자들에게는 신탁청이 인수한 ‘구채무’의 상황이 이자를 붙여서 상속부채상환기금(Erbblastentilgungsfonds)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독 금융회사들의 청구권은 1995년을 기준으로 980억 마르크였는데, 이 중 267억 마르크가 이자였다. 그리하여 원금상환을 시작도 하기 전인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청구권은 이자 발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방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이러한 처리방식을 평가보고서에서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은 만약에 연방정부가 구채무청구권을 직접 인수해서 경상예산에서 상환했다라면 납세자 부담을 수십억 마르크는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금액은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출금리에서 구해진 금액이다. 반면에 연방정부는 훨씬 저렴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속부채상환기금을 위해서 보충예산을 편성했으며, 그리하여 납세자에게 구신용청구권과 동독은행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비용, 신탁청의 적자를 실제 통일비용으로 제시했다.

5. 서독은행들은 동독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도 부당이익을 취했다. 가령 연방감사원에 따르면 DKB 소유 토지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다. 즉 “최종 구매가격을 측정하기 위



한 데이터와 추가평가를 위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구매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었다. 신탁부동산회사의 확정된 절차는 토지매매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토지가격의 상승은 사후적인 추가평가를 통해 추가지불을 수반해야 한다.”

여기에서 왜 DKB를 매각할 때 구채무청구권이 구매은행인 바이에른주립은행(Bayerische Landesbank)에 이전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연방재무부가 이를 통해 동독기업들을 보호하려 한 것 같은 인상도 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구채무청구권을 매입은행에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화폐통합 이후 DKB는 신탁청이 관리를 맡은 구동독기업들의 주채권자가 되었다. DKB도 신탁청이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모기업인 신탁청이 자회사인 DKB의 주채무자가 되었다. 그래서 신탁청은 일단 자신이 관리하는 기업의 채무를 DKB에 상환해야 했다. 그래서 신탁청은 서독은행들을 중간에 개입시켜 채무를 상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신탁청은 구채무청구권을 이자부담을 초과해서, 즉 서독은행들이 부과하는 마진을 포함해서 상환해야 했던 것이다.

6. 동독 시절 부과되던 이자율은 시장경제적 의미의 이자율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동독정부의 예산에 의해 할인되거나 인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 후 시장경제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10%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로써 ‘구채무(Altschulden)’ 수준이 1992년에만 최소한 100억 마르크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10%를 상회하던 금리에 따른 이자수입만 해도 매입가격의 5배 가까이 되었다.

7. 연방정부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구동독은행의 구채무청구권을 서독 민간은행들에게 양도함으로써 더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결과가 되었다. 가령 DKB는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가령 업무지원협약에 대

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리파이낸싱해야 했다. 그리하여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신탁청에는 더 이상 채무가 없는 기업과 관련된 구채무 청구권은 1991년 말에 구동독중앙은행에 재이전되었고 필요한 자본으로 정산되었다. 구동독중앙은행의 구채무청구권은 1994년에 연방정부 소유의 재건신용은행(KfW)으로 이전되었다. 이로써 신탁청이 수행하는 구채무청구권의 상황이 민간은행의 개입을 통해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구채무구제법(Altschuldenhilfegesetz)에 의해서 구채무청구권의 부분탕감과 상황에 의무가 있었고, 지자체들은 DKB를 매각하는 시점에 구채무청구권을 시장경제에서와 같은 실질적인 채권으로 인정하기를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 청구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했다. 그에 따라 DKB를 매각하기 이전에 구채권청구권을 분리한다는 결정은 연방정부가 서독은행의 중간 개입을 통한 상환이라는 비싼 길을 택하는 결과가 된 셈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동독기업들에게는 이 길이 전적으로 강제되었다.

8. 연방감사원은 연방정부의 동독은행제도 정리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극히 비판적인 종합평가에 이르렀다. “연방감사원의 견해에 따르면 화폐동맹이 시작되면서부터 독일연방은행이 발권은행기능을 구동독지역에 대해서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다음에는 구신용청구권을 가능한 한 조속하게 연방자산으로 전환된 동독중앙은행에 다시 통합했어야 한다. 은행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구채무청구권의 규모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밖에 동독중앙은행에 통합했더라면 구채무청구권을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을 것이다... 연방감사원의 견해에 따르면 은행제도의 개혁과 구채무청구권을 시장경제적 은행제도로 전환한 결과 발생한 최종대출자 채무의 커다란 증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한 최종대출자의 재정적 부담은 신연방주



의 경제회복 과정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늘날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했다.”

9. 여기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은 왜 연방정부가 동독경제는 물론, 연방재정과 납세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그러한 행위들을 했느냐는 것이다. 연방 감사원의 보고서가 연방의회에 제출되자 야당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법학자인 볼프강 함스(Wolfgang Harms)는 연방정부가 것처럼 값비싼 행동을 한 동기를 동독재정의 실상에 대한 오관의 정도를 적시에 인정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신탁청이나 그 후속기관들이 구동독 국영기업들의 ‘구채무청구권’을 청구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연방정부의 채무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고 유럽통화동맹을 위한 수렴기준에서 고려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시간벌기를 하는 것이 연방정부에게는 이자를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수렴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속부채상환기금을 위한 부속예산을 편성했다. 연방정부가 부채를 경상예산에서 상환했다더라면 수렴기준은 충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구채무청구권을 구동독 국영기업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이처럼 행동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화폐통합을 가능한 한 조속히 실현하여 동독유권자의 표를 얻으려 했다. 연방정부는 급속한 화폐통합의 결과와 구채무청구권이 실제 채무로 전환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또한 연방정부는 조속한 화폐통합을 위해 서독은행들에게 구채무청구권을 ‘선물’로 주면서 이들의 협력을 구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르겐 슈타르크(Jürgen Stark) 연방재무차관은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통일 이전에 서독 금융회사들과 동독은행들 사이에 협상과 사전계약이 있었음을 인

정했다. 이 협상에는 연방정부, 서독은행들, 신탁청의 대표와 함께 동독지도부 대표도 참석했다. 협상 주제는 1990년 7월 1일로 예정된 화폐통합 준비였다. 나아가 동독은행을 청산할 때 모든 이익이 인수은행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슈타르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우리는 7월 1일자로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전환하기 위해서 잘 돌아가는 은행시스템이 필요하다... 신연방주들에 진출한 은행들에게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답변은 타당하지 않다. 연방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은행들이 들어간 지점들은 투자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의한 보조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염가에 매각되었다. 결국 서독은행들에게는 구채무청구권의 이전과 상속부채상환기금의 설치를 통해서 수십억 마르크의 선물을 주면서 조속한 화폐통합을 위한 협조를 얻어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나타났다.

또한 서독 산업계와 은행들이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예상되는 동독 경쟁기업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야당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감사원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연방의회 표결에서 패했다.

10. 독일경제연구소(DIW)는 구채무의 실제 채무로의 전환은 동독기업들과 경제에 이 전환이 없었더라면 피할 수도 있을 ‘도산과 실업’을 안겨줄 것으로 평가하면서 동독기업들에게 이 구채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회생 가능한 기업들도 과도한 채무부담 때문에 붕괴될 수 있다... 회생 가능한 기업들의 붕괴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나 사회적 관점에서 손실을 나타낸다.”(Pohl 1990) 막스-플랑크 경제체제연구소도 “계획경제의 재정지원을 시장경제의 신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민영화된 기업의 운신향을 제한했다.”(Mummert 1998)는 결론에 이르렀다.

11.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와 이에 기초해서 연방의회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



내용에 비추어볼 때 동독 은행시스템의 구채무청구권의 정의와 청산과정에서 취해진 연방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계획경제의 기업채무를 시장경제에서의 기업부채로 정의하고 기업들에게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둘째, 연방재무부가 구채무청구권을 서독은행들에게 이전하고 연방정부가 상속부채상환기금에 의한 배상을 보증한 것은 동독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서독은행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 법률전문가들이나 경제연구소들의 공통된 결론은 동독기업들의 소위 ‘구채무’는 실제로는 재정할당이며 시장경제적 의미의 신용과는 그것의 전제, 기능, 책임소재의 면에서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통일조약에서 구채무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거부했다. 그리하여 동독기업, 협동조합, 지자체에게 부과된 가공의 ‘구채무’를 상환의무가 있는 실제 채무로 자의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높은 이자부담을 지우는 한편, 구채무청구권을 서독은행들에게 이전함으로써 동독 기관들을 ‘극단적인 착취와 종속의 상태’(Wiesenjahn)로 몰아넣었다. 동독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정할당을 삭제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로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것이다. 이는 계획경제의 운용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강제납입’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을 둘 수 없었던 기업들은 자력으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필요한 이윤을 남길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현대적 장비를 갖춘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과도한 부채를 떠안으면서 민영화에 실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이미 1990년 봄에 경고했듯이 기업들이 채무부담으로 도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 당연한 귀결은 동독경제의 전면적인 파괴였다.

셋째, 신탁청은 이들 기업을 가치 있는 기업이 아니라 부실기업으로 매각했다. 수많은 기업이 ‘조각조각’ 매각되었고 1 마르크짜리 부동산으로 투매되었다. 그마저도 되지 않은 기업은 가동중단되었다. 서독기업이 경쟁을 피하

기 위해서 동독기업을 매입한 다음 폐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많은 일자리가 파괴되었다. 결국 신탁청이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떠안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나마 정작 혜택을 입은 것은 더 이상 동독기업들이 아니라 서독의 인수기업들이었다. 신탁청이 관리했던 기업의 94%가 서독기업에 매각되었고 6%만 동독 인수자들이 매입했다.

넷째, 구채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독기업과 동독기업을 차별대우했다는 의혹이 있다. 연방감사원에 따르면 동독기업이 떠안았던 구채무의 거의 100%를 신탁청이 떠안았다. 신탁청이 떠안지 않은 ‘구채무’는 동독 매입자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있다.

회계통합 이후 신탁청이 관리하지 않고 동독인들의 소유로 남아 있던 농업생산협동조합들에게는 ‘구채무’가 전액 강요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동서독기업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가 두드러진다. 서독 매입자들에게는 구채무가 면제되었고 동독 농업생산협동조합 소유주들에게는 전혀 면제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면제되었다는 사실은 불평등한 대우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서독기업들의 무분별한 행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독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동독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구채무’를 탕감하지 않는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동독인의 수중에 남아 있던 이 경제부문마저 현대적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EU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동독 주택경제는 파괴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보수 여당인 기민당의 장관 출신 정치인 루퍼트 솔츠(Rupert Scholz)가 작성한 평가보고서 덕분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부문도 보유주택의 15%를 민영화하고 그 수익을 상속부채상환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민영화는 대부분 실수요자가 아니라 은행이나 부동산회사에게 이루어졌으며 호화정비를 통해 투기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세입자들의 자율관리와 공동결정을 통해 임대료를 가능한 한 낮춘다는 협동조합의 이상은 파괴되었다.



다섯째, 연방정부에 의한 ‘구채무’의 자의적인 부과는 동독 지자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업이나 협동조합과는 반대로 동독 시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사후적으로 ‘구채무’가 부과되었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서명하지도 않은 채무계약에 대해 원금상환과 이자납입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횡포였을뿐만 아니라 명백한 조약 위반이었다. 통일조약에는 계획경제에서 체결된 신용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화폐통합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은행들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할지라도 수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구채무청구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차액보전청구권마저 인정한 것은 보상이 과도하다는 것이 연방감사원의 지적이었다.

여섯째, 연방정부의 구채무정책은 서독은행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였을뿐만 아니라 통일 후 동서독 내부의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정책은 서독 납세자들에게 ‘구채무’와 신탁청의 채무를 통일에 따른 실제 채무로 주장했고 납세자들을 상속부채상환기금의 상환에 동원함으로써 사실상 ‘통일비용’을 부풀렸다. 반면에 동독주민은 동독 경쟁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무분별한 서독기업인들이 동독기업을 인수한 다음 바로 폐업하고, 그 몫으로써 일자리를 파괴하도록 유도한 신탁청의 민영화정책으로 생존기반을 상실한 셈이 되었다. 동서독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일곱째, 이러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 연방정부의 구채무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은 여러 형태로 제안되었다. 일단의 경제연구소들은 동독의 구채무를 한 국가기관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청구권으로 평가하고 서로 상쇄하여 결과적으로 구채무를 사실상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는 법학자 함스(Harms)와 샤후트슈나이더(Schachtschneider)가 제안한 것처럼 ‘구채무’가 시장경제체제로 이전되지 않도록 통일조약의 본문을 실행에 옮기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구채무’의 상환과 관련해서 신연방주에 지금

까지 유효했던 법이 적용되었더라면 동독기업, 협동조합, 지자체의 채무부담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동독 지자체들은 아무런 ‘구채무’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택경제와 농업부문의 협동조합들은 이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원금만 매년 1%씩 상환하면 되었을 것이다. 제조업부문의 국영기업과 콤비나트는 채무의 상환과 이자납입 의무를 져야했겠지만 금리는 10%가 넘는 시장금리가 아니라 1.8%였을 것이다.

‘구채무’의 이전에 따른 피해는 ‘구채무청구권’을 민간은행에 양도하지 않고 연방이 소유하게 된 구동독중앙은행에게 이전했다더라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연방감사원이 선호했던 이 방안은 비록 ‘구채무’를 재정할당이 아니라 실제 채무로 해석하는 부당함은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은 안고 있지만 ‘구채무’의 정산을 조정하는 데에는 유리했을 것이다.

연방정부는 결코 ‘구채무’를 실제 채무로 전환해야 할 불가피성에 직면한 적이 없다. 앞서 설명한 대안들은 연방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자신과 은행, 서독 경제계에만 유리한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해 동독경제에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가해졌다. 어떤 정치적 결정이 당사자에게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었다.

화폐통합 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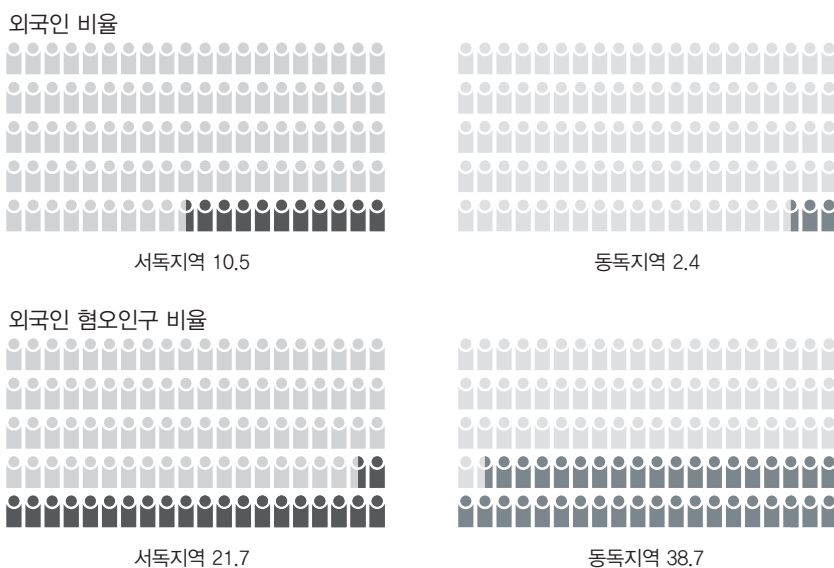
켈른에 소재하는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가 화폐통합 25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동독주민들에게는 화폐통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1:1이라는 교환비율 때문에 일단은 환호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동독경제, 동독기업에게는 화폐통합은 비용증가와 경쟁력 및 시장의 상실을 의미했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들이 밀려들었고 국영기업 구조는 시장경제에 부적합했다.

화폐통합에 걸었던 다양한 기대는 일시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독인들의 생활수준이 몇 년 사이에 서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안정적인 마르크화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동독인들은 소비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 경쟁력을 상실한 동독기업들이 파산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폐통합 4반세기의 경제적 결산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다. 일단 동독지역은 이제 더 이상 주민이탈지역이 아니다. 1990년 이후 동독지역은 인구가 거의 200만 명이 줄었다. 지금은 유입과 유출의 수가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성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니다. 동독지역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적지 않다. 그래서 할

레경제연구소 올리버 홀테밀러(Oliver Hotemöller) 교수는 동독경제의 활성화
 화를 위해서 이전지출이나 보조금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능한 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업중단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작센-안할
 트주만 하더라도 청소년의 1/8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독일 전역의 학교교육을 비교 테스트한 결과
 동독지역 학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이 활
 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촉진되어야 하고 외국
 인 학생을 유치하여 두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림 1-4>참조). 동독지역의 외국인 혐오인구 비율(38.7%)이 서독지역(21.7%)
 보다 높은 것은 동독이 당초 반파쇼국가로 건설되었고 동독 스스로 나치 청
 산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자부했음을 고려한다면 기이한 현실이다.

그림 1-4) 동서독지역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 혐오인구 비율(2012년)



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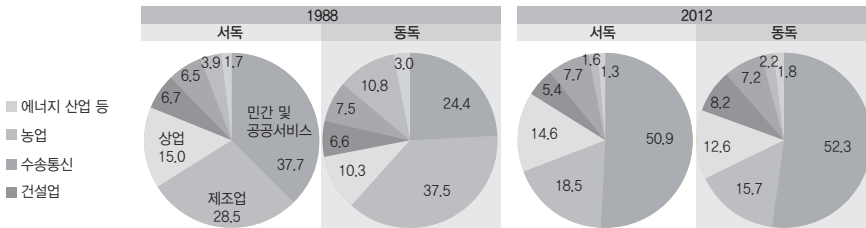
또한 동독경제는 화폐통합 후 4반세기가 지난 지금 서독으로부터의 막대
 한 재정지원 덕분에 ‘빈민가’는 아니다.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 비교해도 동

독지역은 중간 수준이다. 경제력은 체코나 폴란드의 두 배 가량이고 일부 지역은 서독 수준에 근접했다. 가령 브란덴부르크주는 서독에서 가장 취약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 도시 중에서는 포츠담, 드레스덴, 라이프치히가 서독의 도시들에 견줄만하다.

또한 화폐통합 후 25년 동안 동독경제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적지 않았다. 첫째, 출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동독은 구조전환에서 매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그림 1-5〉 참조). 1988년 동독 취업인구의 부문 간 배분은 서독의 1965년과 비슷했다. 신탁청의 주도 하에 1992년부터 동독산업은 추격을 시작했다. 수십억 마르크를 투자해서 작센-안할트주의 화학공장이 현대화되었고, 칩공장이 드레스덴에, 자동차공장이 츠빅кау, 에르푸르트, 라이프치히에 입주했다. 그 밖에 중견기업들이 서부 작센주의 기계공업에서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그림 1-5) 구동독의 구조전환-산업부문별 취업인구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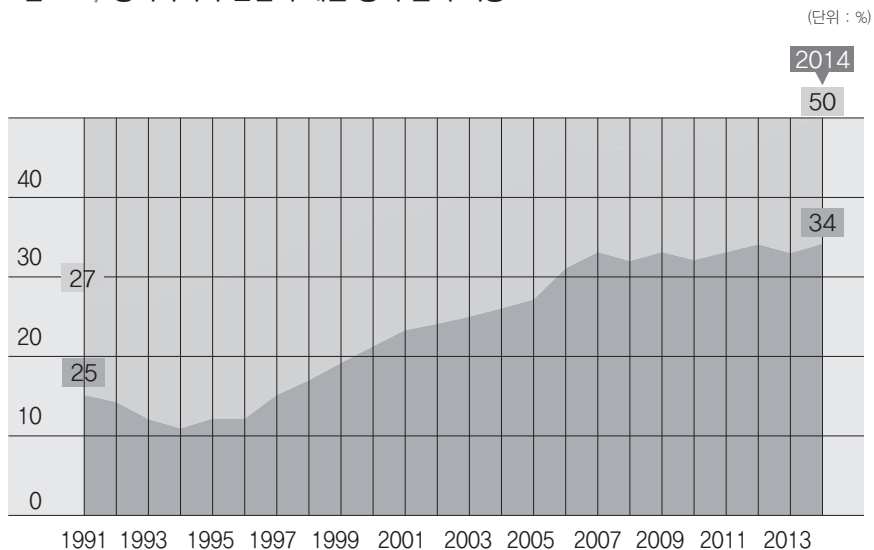


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2015)

그 과정에서 제조업은 동독 총생산에서 18%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서독에 비해서는 5% 남짓 적은 비중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확연하게 높은 비중이다. 동독 제조업의 부활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1-6〉 참조). 1994년부터 동독 제조업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1%에서 2014년 34%로 증가했다. 1990년대 창업붐은 제조업에서 수많은 중소기업을 탄생시켰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했다. 아울러

창업률은 동독지역 총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7%로 급속히 상승해서 서독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림 1-6) 동서독지역 산업의 매출 중 수출의 비중



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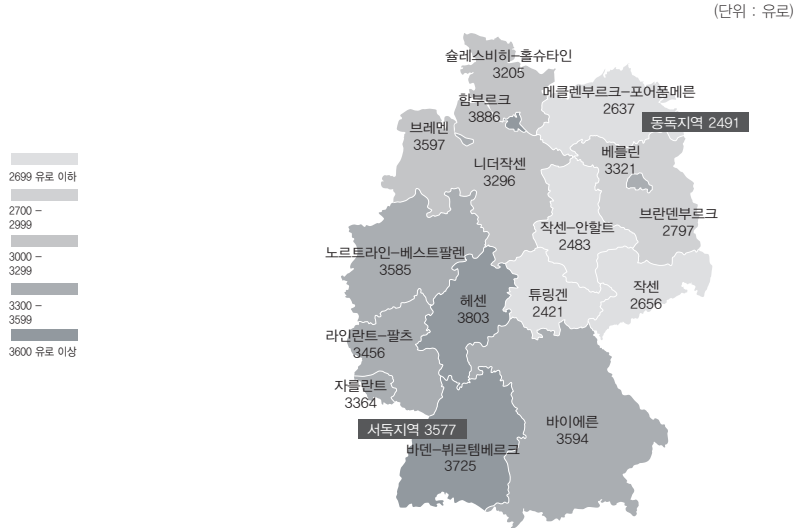
동독에서 각별하게 활발한 부문이 관광이다.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는 이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주민 1,000명당 관광객 숙박 수가 1992년 3,500명에서 2014년 17,000명으로 증가했다.

동독지역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교통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이다. 동독과 서독을 연결하는 거의 모든 대규모 철도와 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동독지역이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이 경험했던 경제기적이 1990년 이후 동독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동독경제는 너무 낙후되어 있었고, 서독경제는 추격하기에 너무 강했다. 할레경제연구소 올리버 홀테밀러(Oliver Hotemöller) 교수에 따르면 “너무나 높은 기대들이 많았다.” 그는 미국 남북전쟁 후 남부

가 북부에 근접하는데 100년이 소요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동독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독지역의 1인당 총생산은 서독지역의 79%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1-7). 다만 낮은 물가 덕분에 1인당 구매력은 서독지역의 84%에 이르고 있다.

그림 1-7) 정규직 근로자 월소득총액(2013년)



출처: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본사를 동독에 둔 콘체른이 적기 때문에 세수가 적어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주가지수(DAX)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본사는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뮌헨에 있다. 그 밖에 기계공업이나 전자산업처럼 연구개발이 활발한 지식집약적인 부문은 동독지역에 현저하게 적다. 그러므로 동독의 모든 주들이 재정조정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독일연방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지역의 주들에 비해서 재정상태는 건전하다. 특히 작센주는 부채비율이 두드러지게 낮다. 덕분에 지난 20여년 동안 공공투자가 서독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덕분에 인프라스트럭처, 학교 건물, 병원, 산업단지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서독 수

준에 근접했다. 2020년부터 새로운 재정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동북지역을 위한 특별지원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화폐통합 후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동북기업은 많지 않았다. 동북기업의 생산성은 서북기업의 40%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투자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처음 3년 동안에 걸친 (특히 청년들의) 이주 물결에도 불구하고 동북지역의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았다. 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이 동북보다 저렴하게 생산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에서처럼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들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나마 창업이 활발했다. 서북과 외국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지점을 개설했고 많은 동북인들이 자영업자로 변신하면서 창업을 했다. 이들이 동북경제의 붕괴를 완화시킨 역동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창업이 성공하고 있는 데에는 높은 교육훈련 수준에 힘입은 바 크다. 서북 콘체른이 설립한 일부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서북에 비해서도 높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작은 기적은 적응압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수많은 동북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총생산의 측면에서 처음 몇 년 동안 관찰되었던 추격과정은 이미 19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정체상태에 들어섰다. 이후 서북과의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으며 서북에의 접근이 다시 가시화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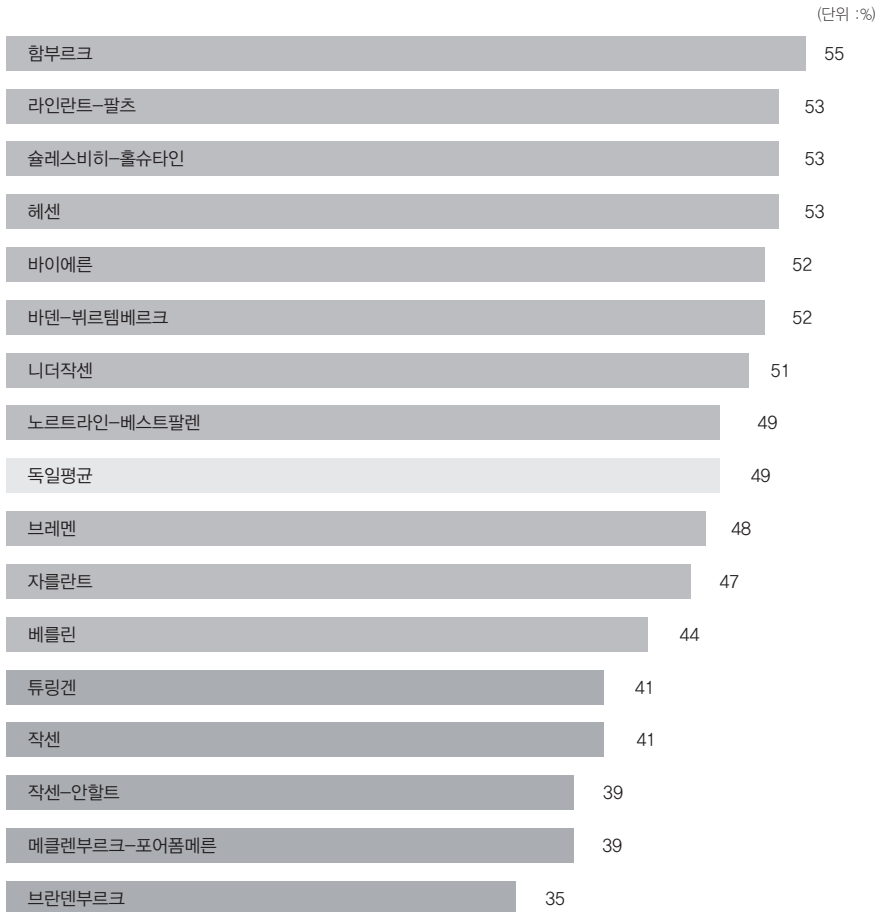
할레경제연구소 홀테밀러 교수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규모가 작은 것이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지역에 콘체른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앞으로도 평균매출이 100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북지역에서는 그 두 배이다. 규모의 차이는 연구개발역량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동북지역 기업은 대다수가 내수목적으로 생산한다. 생산의 1/3만 수출되고 있다. 서북지역에서는 수출 비율이 절반가량이다.

그 밖에 많은 동북지역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자본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동북지역은 장기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나



아가 그동안 서비스기업에서 생긴 일자리가 많았다. 제조업부문은 전체 생산의 15%에 지나지 않아 서독지역의 25%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생산성은 서독지역의 3/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동독지역 성장에는 베를린이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 베를린의 호황이 주변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관광객 수에서 바이에른주를 앞질렀다.

그림 1-8 > 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주민의 비율(2012년)



출처: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ln(2015)

끝으로 동독지역 경제회복의 걸림돌은 1990년 이래 누적된 200만 명이 상의 인구감소이다. 그 이유는 출산률 감소와 서독 이주이다. 지금은 정체상

태에 있지만 동독인의 서독 이주는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잠재적 구직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실업문제는 심각하다. 2005년까지 동독경제 붕괴에 따른 결과로 동독지역 실업률은 19%에 이르렀다. 그 이후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실업률은 거의 10%에 육박해서 서독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 행복지수에서도 동서독 사이의 격차는 아직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8). 구동독지역에 해당하는 5개 주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주민의 비중은 모두 독일 평균보다 낮을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따르는 격동의 시절이 동독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 부설 동독연구연합의 클라우스 슈뢰더(Klaus Schröder) 교수는 재정이전을 합산하면서 그 종합적인 성과를 요약했다. 경제개발지원금, 연대기금, 지방재정조정, EU지원금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이전지출까지 모두 더한 다음에 동독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뺀 결과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조 유로의 순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Greive 2014). 이 중 60-65%가 사회보장부문으로 흘러들어갔고, 그중 대부분이 연금으로 지출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이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5년 이후 동독경제의 추격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Ifo경제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 격차는 향후 25년 동안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동독에는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구감소가 경제적 역동성을 잠식하고 있다. 베를린인구발전연구소(Berlin-Instit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구 변동이든, 경제력이든, 자산이든, 유산이나 농업기업 규모든 어디에서나 상당히 정확하게 과거 경계가 그려지고 있다.” 소비습관이나, 교육 수준, 기대수명, 자녀 수 등에서는 접근하고 있는 양상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의 결론은 상당히 냉정하다. “한동안 분단되었던 두 부분이 진정으로 결합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 세대는 더 걸릴 것이다.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동서독 화폐통합은 독일통일의 결정적인 지렛대였다. 그것이 가지는 세계사적인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유럽화폐동맹은 이미 1950년대부터 논의되고 있었던 주제였는데 반해 동서독 화폐통합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정치적 의제였다. 또한 유럽화폐통합은 동종의 경제체제를 가지는 나라들을 공동의 화폐로 결합하는 작업인데 반해, 동서독 화폐통합은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었다. 체제전환과 화폐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과업이었다. 더욱이 경제발전 또는 생산성의 격차가 큰 두 나라를 한 나라로 통합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낙후된 지역을 경제적으로 새롭게 재건하는 문제였다. 게다가 정치권은 노동력의 대량이주를 단기간에 차단해야 하는 압력을 받았다. 인적 자원이 계속 유출된다면 동독지역의 경제적 재건이 불가능했을뿐만 아니라 서독지역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권고했던 단계적인 방안은 1990년 3월의 인민의회 선거를 통해 거부되었고 급속한 화폐통합이 선택되었다. 서독의 콜 정부는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확신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급속한 화폐통합을 부추겼다.

이처럼 독일의 화폐통합이 역사적 전례가 없었고 정치적인 ‘외적 강제’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점을 모두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기는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은 매우 다양하다.

적어도 통일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회피불가능 비용(Unavoidable Costs)과 회피가능 비용(Avoidable Costs)으로 구분할 때 적지 않은 회피가능 비용을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회피가능 비용은 주로 통일을 정치 프로젝트, 선거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그리고 독일 경제학자들이 평가하듯이 이 비용은 너무 컸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교환비율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당시 화폐통합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생산성에 부합되는 교환비율이 결정되어야 생산성에 맞는 소득이 결정되고 동독의 자력에 의한 경제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이를 위한 중요한 중간단계가 바로 비용절감, 특히 임금인하이다. 임금이 하락하면 동독 주민의 이주는 계속되겠지만 그것은 화폐통합 후 어차피 그러했다. 말하자면 이주행렬은 화폐통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5월과 6월에 잠시 주춤했을 뿐, 화폐통합이 발효되면서 동독기업의 줄도산으로 불안전고용과 실업이 급증하자 이주는 7월부터 다시 증가했으며 1991년 3만 명, 1992년 2만 명, 1993년부터는 1만 7,000명 수준에서 이주행렬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동독이주민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선택인 화폐통합이 이주민 행렬을 구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과도한 임금인상이 물론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고, 따라서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임금이었더라면 동독기업의 회생가능성은 한결 높아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임금은 급등했다. 근로자 대표에게 단체협상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폐통합 이전에 협상 상대였던 콤비나트 대표는 과거의 정치적인 경력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강하게 맞설 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근로자였기 때문에 임금 인상



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 대신해서 사용자단체를 대표했던 협상 상대 또한 서독 경제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동독지역에 강력한 경쟁자가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정치적으로도 자율적인 노사협상권은 기본권에 속했기 때문에 개입하기 불가능했다. 노사의 자발적인 자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서독 생활수준의 조속한 균등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동독인들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했다.

결국 동독기업의 줄도산으로 인해 발생해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엄청난 재정부담은 사전에 저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보전해주는 사회정책과 결합했더라면 총액 면에서 오히려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살아남는 동독 기업이 있었다면 경제성장에도 유리했을 것이고 저임금 일자리나마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동독주민에게는 충분한 가치분소득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므로 생계비를 보전해 줄 수는 사회보장 급여가 제공된다면 동독인들은 나름대로 노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서독 화폐통합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명확하면서도 종합적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거론될 수 있다.

첫째, 북한주민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 주민의 생활수준이 적어도 하락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통일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의 측면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독주민들처럼 북한주민들이 통일로부터 과도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독 정치인들의 역할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가 아무리 낙후되었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회생시켜 통일 경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파괴 후 재건’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것은 비단 경제적

인 문제만은 아니며 북한주민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다. 그들이 통일한국에서 단지 남한주민이나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동참하고 기여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들이 통일로부터 기대했던 생활수준의 향상에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족을 부분적으로나마 메워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한국에서 남북한주민 사이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이전이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독일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동독인의 물질적 욕구를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동독주민의 열망을 통일과정과 동독 재건과정에 동원할 수 있었더라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동독인의 자긍심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동독인들 스스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들의 의존의식 또한 줄었을 것이며 보다 당당하고 대등하게 통일독일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통일 4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남아 있는 동서독인들 사이의 ‘이쪽 저쪽’ 차별의식이 일찍 완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셋째, 화폐교환비율을 결정할 때 반드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은 동독주민의 소득보장, 기업의 경쟁력, 물가안정, 재정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달성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물가안정이 위협받지 않은 것이 성공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연방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그에 따른 동독기업의 줄도산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나머지 세 가지 목표에서는 모두 실패했다. 독일통일의 승자는 콜 총리와 그의 정부가 지원해준 독일은행 및 경제계라는 평가가 결코 야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넷째, 화폐통합을 화폐통합으로서만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통일정책의 하나로서 설정하고 다른 정책, 특히 사회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교환비율을 결정할 때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기 때문에 평가절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주민의 소득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정책적 부조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화폐통합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보다 종합적인 경제정책적 고려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1차적인 목표가 있지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국면에서는 이 목표에만 집착해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화폐통합에서도 이데올로기적인, 정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점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폐통합 국면에 거국적인 협의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독이 화폐통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독 국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보인 거부감은 이들 기업의 몰락을 부추김으로써 통일비용, 재정부담을 가중시켰을뿐만 아니라 동독인들이 자력으로 재기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통일에 대해서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국가가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과감하게 담당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에서처럼 민간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통일 후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덟째, 화폐통합이라는 과도기적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서 각종 편법이나 불법행위를 차단할뿐만 아니라 그에 의거한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환대상이 되는 화폐자산을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철복 후철계’.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한 한국은 동서독을 충실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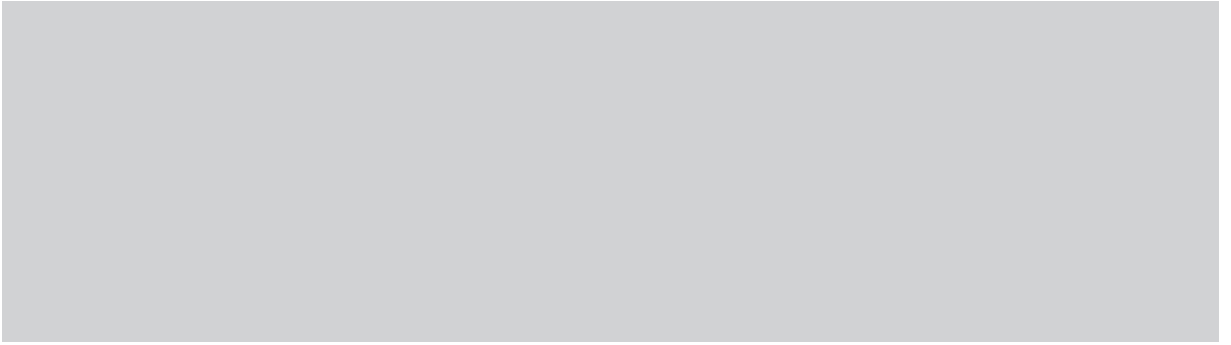
- Bofinger, P.(1991), "eld- und Kreditpolitik nach der Bildung der deutschen Währungsunion" In: Gröner, H., Kantzenbach, E., Mayer, G.(Hrsg.), *Wirtschaftspolitische Probleme der Integration der ehemaligen DDR in die Bundesrepublik*, Berlin.
- Brenke, Karl(2015), *Die deutsch-deutsche Währungsunion: ein kritischer Rückblick*, DIW, *Wochenbericht*, Nr. 27.
- Christ, Peter(1990), *Geschäfte mit Transferrubeln bescherten Gaunern Millionengewinne*, *Zeit Online*, 1990년 10월 26일.
- Deutsche Bank, "DD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1990년 6월 18일.
- Flassbeck, H., Hoffmann, L., Pohl, R.(1990), *Reform der Wirtschaftsordnung in der DDR und die Aufgaben der Bundesrepublik*, *Wochenbericht des DIW Nr. 6/1990*.
- Greive, Martin(2014), "Deutsche Einheit kostet 2,000,000,000,000 Euro", *Welt*, 2014년 5월 4일자
- Hübner, P.(1998), "Industrielle Manager in der SBZ/DDR. Sozial- und mentalitätsgeschichtliche Aspekte". *Geschichte und Gesellschaft*, Nr. 24.
-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2015), "Viel erreicht, noch viel zu tun", *iw-dienst*, 41. Jahrgang, Ausgabe 26, 2015년 6월 25일.
25. 6. 2015
- Ludewig, J.(2015), *Unternehmen Wiedervereinigung. Von Planern, Machern, Visionaren*, Hamburg.
- Mummert, Uwe(1998), *Ordnungswechsel und politisch-ökonomische Prozesse – Das Beispiel der monetären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s*, *Max-Planck-Institut zur Erforschung von Wirtschaftssystemen Jena (Hrsg.)*, unveröffentlichtes Manuskript, *ORDO*, 49, 1998에 게재.
- Pohl, Reinhard(1990), "Alt-Schulden der DDR-Betriebe: "Streichung unumgänglich", in: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Wochenbericht*, 1990, H. 36.
-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1990), *Brief des Sachverständigenrates vom 9. Februar 1990 an den Bundeskanzler. Auf dem Wege zur wirtschaftlichen Einheit Deutschlands. Jahresgutachten 1990/91*, Stuttgart.
- Schürer, G., Beil, G., Schalck, A., Höfner, E., Donda, A.(1989): *Analyse der ökonomischen Lage der DDR mit Schlussbetrachtungen. Vorlage für das Politbüro des Zentralkomitees der SED*, 27.10.1989.



Wiesenjahn, Ilona, "Die Übernahme des ostdeutschen Bankensystems – Ein Milliardengeschäft für westdeutsche Großbanken", ICARUS, Zeitschrift für soziale Theorie und Menschenrechte, Jg.4,1998/3.

Willgeroth, H.(1990), "Probleme der deutsch-deutschen Währungsunion", Zeitschrift für Wirtschaftspolitik, Nr. 3)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정책문서를 통해 본 화폐통합과 독일통일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은 형식적인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3개월 전인 1990년 7월 1일에 이루어졌다. 독일통일의 실질적인 '설계사'라고 불리는 1990년 당시 수상청 경제국장이자 신연방주 특임관이었던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따른다면 화폐통합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1989-1990년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던 독일의 상황 속에서 경제학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¹ 실제로 1989년 10월부터 1990년 1월까지 4개월 동안에 무려 30만 명이 넘는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할 수 있다. 헬무트 콜 수상의 서독 연방정부는 조기 화폐통합으로 이주의 물결을 멈추려고 한 것이다.

1989년 11월부터 화폐통합이 실현된 1990년 7월까지 만들어진 다양한 정책문서들은 동독의 변혁에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동서독정부와 전문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잘 보여준다. 지금도 독일통일의 주역들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칠혹같이 어두운 밤에 알프스의 암벽을 등반'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과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지 25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독일통일은 분명히 성공

.....

¹ Johannes Ludwig, Unternehmen Wiedervereinigung. Von Planern, Machern und Visionaern. Osburg-Murmann Publishers, 2015.

적인 작품이었다. 그리고 화폐통합은 통일의 가장 첫 단계로 이루어졌다.

당시 독일의 정치인들과 실무자, 전문가들이 부딪혔던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독일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1989년 이전의 동독의 경제구조를 검토하고 변혁기 동독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했었는지 그리고 동독의 변혁이 시작된 이후 화폐통합에 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점검해 볼 것이다. 화폐교환율과 화폐통합 과정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당시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었는지 점검할 것이다. 그것은 특히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독경제와 금융

1989년 이전의 동독경제는 오랫동안 비교적 안정되고 산업화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동구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동독의 경제상황이 분명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지도자들이 동독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것이 통계수치의 조작에 기반을 둔 정치적 선전일 뿐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서방에서 동유럽을 분석하던 사람들도 동독에 대해서는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서구에서 경제발전의 지표로 간주하는 국민총생산, 경제성장률, 취업동향, 물가상승률, 정부예산의 운영과 결산 등에 대한 동독의 통계만 본다면 동독경제가 1970년대 초반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가을 이후 동독사회 내에서 대변혁이 진행되면서 동독경제가 급격하게 붕괴양상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동독정부가 발표한 통계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독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이유는 열악해지는 경제 상태를 은폐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졌다.

특히 1980년대 동독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70년대 초반

² 내독교역의 신용한도(문서번호 3).

발터 울브리히트가 실각하고 에리히 호네커가 사회주의통합당의 새로운 당 서기로 취임하면서 동독경제는 1960년대에 진행되었던 ‘신경제체제’ 실험을 포기하고 다시 중앙집권적 경제로 전환되었다. 그와 함께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동독 지도부는 국민생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소비제품 생산 활성화와 주택건설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호네커 정권의 경제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독일통일 이후 1991년에 독일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1980년대 중반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코메콘에 속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20% 정도 높았다. 1989년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의 환율을 1:1로 비교한다면 1989년 동독의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이 서독의 60%에 달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자동차, 소비재, 식료품, 건축물 등 동독의 생산품들의 대부분이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동독의 내수시장이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낮고 단순해도 동독 내에서는 충분히 판매될 수 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동독의 대외경제상황이 악화되어 1980년 동독의 대외부채가 100억 달러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1981년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서방은행에 대해 지불이행능력을 상실했을 때 동독의 대외신뢰도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동독 또한 더 이상의 신규 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1983년에 바이에른 주지사였던 요하네스 슈트라우스의 주선으로 약 20억 서독 마르크의 차관이 제공되어서 이때 동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동독의 경제위기가 결과적으로 1989년에 동독사회에 변혁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라고 본다.

이 장의 목적은 동독경제의 위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통합 이후 발생한 제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동독 경제구조와 금융구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경제위기에 관한 분석은 독일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Andreas Busch, Die deutsch-deutsche Waehrungsunion: Politisches Votum trotz oekonomischer Bedenken, in: Ulrike Liber/ Wolfgang Merkel(편)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Probleme-Strategien-Kontroversen, pp.185-207에서 발췌.

동독경제는 1976-1980년 5개년 계획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동독의 대외 경제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수출 수익금을 종전보다 더 많이 석유 수입비로 소련에 지불해야 했으며, 1976-1980년 5년 간의 대서방 부채 감축문제가 제1과제로 제시되었다.

1981년에 있었던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지불이행능력 상실은 동독에 대한 신뢰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 일례로 동독은 더 이상의 신규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동독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서방 수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화 지불 수입품에 대해 감축정책을 펼쳐야만 했다. 그 결과로 국내물자 조달 사정이 악화되고, 성장저하현상이 초래되었는데, 동독 지도부는 독립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수해야 했다. 처음부터 동독은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동독은 한편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을 해나가긴 했지만 그 밖에는 특히 서방으로부터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자립경제적 독립성을 표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동독은 금속가공산업의 부품 중 5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였다. 반면 서

독의 부품 자체생산 비율은 17%이며 나머지는 수입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국제분업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된 동독은 자급자족 방안을 에너지 경제정책에도 적용하였다. 석유를 국산 갈탄으로 대체하여 갈탄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절약조치에 따라 국내 석유소비를 1978년 1,800만 톤에서 1980년대 들어서는 1,100만 톤으로 억제하였다. 그러나 전체 석유 수입량은 계속해서 연간 2,300만 톤의 규모를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동독정부가 석유제품과 원유를 석유가격이 높아질 때 서방에 다시 수출하여 무역적자를 상쇄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독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석유제품의 비중이 1971-1975년에 3.4%였던 것이 1976-1980년 5개년 계획기간에는 9.0%, 그리고 1982년에는 28.7%로 증가하였다. (...)

동독은 이처럼 어렵게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국민소득 성장의 대부분이 경상수지 개선에 투입되었다. 1981-1985년 평균 국민생산소득은 4.3%의 성장을 보인 반면, 국민소득의 지출률은 0.2%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같이 제한된 여건 하에서도 동독정부는 가급적이면 국민소비에 대한 타격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소비는 2.2%, 사회소비는 0.9% 증가를 보일 수 있었다. 동독정부는 가격보조정책을 통해 개인소비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경제발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86년 정부예산 중 19.4%가 가격보조정책방안에 사용되었다. 이 같은 국민복지정책은 그 대신



다른 부문, 즉 투자부문에서 절약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투자부문 예산은 연평균 5.3% 감소를 보였다. (...)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1970년 이후로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총생산자본의 노화현상을 초래하였다. 그것이 바로 동독경제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1 DM 어치의 수입을 위해 4.4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해야만 했다는 것이 동독의 생산성이 얼마나 저해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1980년에만 해도 1 DM에 대해 2.4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하면 됐었다. 그로써 동독 정치지도자들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작이었던 것이 증명되었다.

Jahn Priewe/Rudolf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eutschen Vereinigung. Frankfurt a.M. 1991에서 발췌

동독은 국제수준의 기술발전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내적 역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던 쇠퇴한 산업국가였다. 동독의 경제구조는 정도상의 차이만 있었지 경직된 상태였으면 산업 분야와 용역사업 분야를 발전시킬 구조개혁의 여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

이같이 동독의 경제개발 상태가 서독보다 훨씬 뒤쳐진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

실사 동독경제의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동독의 출발조건이 서독보다 훨씬 열악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독의 직접 전쟁피해는 서독에 비해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으나, 소련 주둔세력에 의한 시설철거는 극심하였다. 산업 분야에

서의 공장해체율은 26% 정도로 추정되었다. 1945년 5-6월에만 460여 개의 베를린 회사들의 시설들이 분해되어 소련으로 이전되었다. 게다가 아테나우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동독과 서방의 주요 납품업자들과의 사업관계가 단절되었다. 반면 서독은 서독 연방정부의 서방연대정책과 마샬 플랜, 그리고 막대한 미국의 직접투자의 도움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세계 최고인 미국의 기술수준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었다.

반면 동독은 지리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련세력지역에 속해 있었으며, 동독의 수뇌부들도 기꺼이 소련의 지시에 따랐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별 차이가 없었던 1인당 GNP는 1950년에 이미 서독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었다. 게다가 동독주민의 약 10%인 190만 명이 1950년대에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이 고급 전문인력이었다. 반면 1950년대 서독의 주민 수는 약 5백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것도 대부분 고급 노동력이 증가하였다.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경제력의 차이는 그 후 계속 이어졌다. 그 외에 GNP 대비 군비지출은 서독의 2배에 달했다. (...)

동독경제가 충분한 역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경쟁의 부재와 자율적인 공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이니셔티브가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제품업자와 사업자들은 국내의 다른 경쟁상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으며,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대외무역 독점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다. 코메콘 국가들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일반 대외교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생산된 제품을 처리하는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

동독경제의 역동성 미비의 두 번째 원인은 국내외적으로 노동의 분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동독은 소규모국가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제품을 자체생산하였다. 상당한 분야에서 평균 기업규모는 최적 규모 이상이었다.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의 수는 서독의 배에 달했다. 개별 업종에서는 잉여제품들이 수출되었으며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는 동독 자체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또는 아예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들을 수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방대한 생산품목은 제품의 규격화와 다양성의 미비, 모델의 단조로움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나아가 투자제품 산업에 점점 더 악영향을 끼쳤으며 그와 함께 생산성도 급격히 저하되었다. (...)

동독경제의 세 번째 문제는 거대한 중앙행정주의였다. 복잡하게 얽힌 사회와 경제를 중앙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이상에서 언급한 동독경제 몰락의 3대 원인들은 경제제도상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그 체제 자체 내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였다. 집을 새로 단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집을 새로 지어야 했다. 따라서 동독경제는 개혁 불가능한 것이었다. (...)

이러한 모든 제도상의 잘못과 체제 자체의 결함들을 1989-1990년 당시 서독 위성자들이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이들은 이러한 결함들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놓쳐 버렸다. 따라서 이전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몰랐었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독일의 현존 사회주의의 멸망을 현존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은 동독경제의 결함은 강조하면서도 1,000만 동독 종사자들로 구현되는 거대한 경제개발 잠재력을 동독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였다.

동독 계획경제의 특징은 모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들이 그런 것처럼 국가경제가 단일한 계획의 틀에서 계획·관리되었다는 것이다. 히켈교수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9년 당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하는 문제였다.³

동독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금융제도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의해 구축된 금융제도를 급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추어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두 체제의 금융구조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동독의 금융제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동독지역이 소련군의 점령지역이 되면서 그 틀이 잡혔다. 당시 소련군은 동독지역에 있던 모든 금융기관을 일단 해체하였다. 1948년에 화폐개혁을 추진하면서 동독의 15개 지역에 독점은행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런 정책은 물론 사회주의체제의 국가경제는 독점권을 갖고 있는 동독중앙은행이 관리한다고 말한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⁴ 그러나 동독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이 말한 것처럼 독점은행 하나만 설립한 것은 아니었다. 동독 내에는 동독중앙은행(Staatsbank) 외에 적어도 몇 개의 은행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개별적인 은행을 모두 동독중앙은행의 통제·관리 하에 두면서 실질적으로는 일원적인 은행체제를 구축하였다. 동독 국가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모든 회계처리를 동독중앙은행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동독의 금융구조는 서독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게 되었다. 동독의 금융제도에서 신용대출과 이자율은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독중앙

.....

³ 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문서번호 4).

⁴ Mann, Gerald H., Die Transformation des Bankensystems in Ostdeutschland. LDV-liliana Djekovic Verlag, München 1996. p.8 인용.



은행, 즉 국가계획수립을 위한 내각위원회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었다. 동독 금융구조의 특징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일부이다.
- 모든 금융기관은 계획의 실행을 책임질뿐만 아니라 동독중앙은행의 연장선에서 국가계획기구의 경제계획에 포함되었다.
- 금융기관 간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동독의 은행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에 따라 동독중앙은행이 중앙에서 조직과 통제 그리고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발권은행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 외의 금융기관으로는 저축금고와 조합금고 또는 상업협동조합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모두 동독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동독중앙은행은 정부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실천에 옮기는 수행기관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동독경제에서 은행이 담당하는 역할은 동독의 ‘동독중앙은행법’에 명기되어 있다.

1974년에 개정된 동독중앙은행법에 따르면 동독중앙은행은 사업장, 콤비나트, 주택공사, 국내 유통거래와 우편, 전신 등 모든 경제부문과 국가 기구의 재정을 담당하며 동시에 관리·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동독중앙은행은 국가의 경제계획 수립에 참여하며 동시에 국가재정에 부합하도록 대출을 계획하고 그것을 계획위원회와 합의하여 재무부와 내각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다. 동독중앙은행은 내각위원회가 결정한 화폐량과 대출의 규모에 맞추어 ‘대출’의 총액을 관리할 의무를 갖고 있었다. 대출과 이자 그리고 원금상환의 단어가 등장하는 동독중앙은행법의 조항들을 자본주의체제의 금융시장의 논리로 읽으면 동독의 금융구조를 오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5조 1항의 문장은 ‘동독중앙은행은 국가계획의 목표에 따라’ 계약의 틀에

서 재생산과정의 재정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며 생산자들이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통제한다고 명시되었다. 대출받은 생산자는 그것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만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담보에 관한 언급은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대출’이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대출과 달리 담보를 요구하는 신용대출이 아니라, 일종의 예산배정이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국영기업, 주택공사와 모든 협동조합의 회계가 동독중앙은행을 통해 처리되었다. 동독의 동독중앙은행법에는 이러한 회계가 대출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단순히 은행 대차대조표의 항목명칭만을 근거로 동독에서의 ‘대출’을 서구 자본주의 금융제도에서와 동일하게 대출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오히려 국가보조금 또는 예산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 왜냐하면 동독의 개별 사업장에서 대출을 원해서 부채를 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의해 재원이 배정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은행을 통해 개별 사업장과 행정단위에 지급된 대출이 자본주의체제에서의 대출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서구의 학계에도 잘 알려진 것이었다. 그러나 1989-1990년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독 국영기업과 지방행정기관의 부채가 처리된 방식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집단적으로 망각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2005년 7월 1일자 Tagesspiegel은 ‘Schulden ohne Sühne(빌린 적 없는 부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크게 비판하였다.

동독의 동독중앙은행법에 언급된 대출의 개념을 서구 자본주의 금융시장에서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분명히 동독의 모든 사업체와 국가기관은 은행에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다. 화폐통합과 통일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이다. 실제 1990년 7월의 연방은행보고서를 보면 당시 서독의 금융전문가들이 동독 금융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⁵ 그보다는 자본주의체제의 논리에 따라 동독 금융체계의 구조개혁 작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독의 일원적 금융체계가 서독의 이원화된 금융체계에 맞추어 구조개혁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는지에 관해서는 뒤에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⁵ 부록 1 참조.

변혁기-통합으로의 길, 통일을 위한 구상

베를린 장벽의 붕괴 직후인 1989년 11월 13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의 새로운 수반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만 해도 동독정부는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17일 한스 모드로우의 성명서를 보면 새로운 정부가 개혁을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서독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⁶ 그 당시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약속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독일이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통일 25주년을 기념하는 기민당의 당내 행사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1989년 12월 19일에 통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날은 헬무트 콜 서독 수상이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 회담이 있었던 날이다.

쇼이블레의 회고록을 보면 쇼이블레 자신이 헬무트 콜 수상에게 이날 모임에서 한스 모드로우 정부에게 즉각적인 화폐경제공동체를 제안하라고 말

.....

⁶ 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 ‘책임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공동체’(문서번호 5).



했다고 한다. 그것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이주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동원하더라도 대량이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동독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명을 독일통일의 길로 잘 이끌기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고 쇼이블레는 적고 있다. 그의 입장에서는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비록 사회주의통합당 지배체제의 후계자였고, 이들이 그런 정책의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았다고 쓰고 있다. 자유선거가 치러지면 이들이 지배세력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그는 모드로우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동독의 상황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이었고, 오히려 구지배세력을 포함한 모든 동독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도록 유도해야만 한다고 믿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로우 정부에 대한 서독정부의 제안도 그런 방향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⁷

헬무트 콜 수상이 갖고 있던 이런 기본적인 시각은 11월 28일에 그가 서독 연방의회에서 열린 예산회의에서 발표한 ‘독일과 유럽 분단의 극복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 수상 모드로우가 11월 17일에 발표한 정부성명에 응답하였다. 이날 콜 수상은 대동독 지원책과 그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보다 동독체제 내에서 먼저 인간적인 고통을 경감하고 정치적인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만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동독 정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실현이 확실해진다면

.....
⁷ 위의 책 p.21.

우리 쪽에서도 원조와 협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⁸ 나아가 모드로우 수상이 제안한 동서독 간의 ‘계약공동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양국의 다양한 기관과 사회단체들 또한 계약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에 동참하기를 촉구하였다.⁹

동독의 변혁과정을 서독이 조정·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지도부가 스스로 선택·결정하도록, 적어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는 헬무트 콜 수상의 관점에 관한 객관적 평가는 독일역사학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1989년 말, 1990년 초의 동독의 변혁상황을 보면 실제로 동독 지도부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동독 내에서 전개되는 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 1990년 1월 17일에 동독정부가 ‘동서독 선진우호협력협약(Vertrag über Zusammenarbeit und gute Nachbarschaft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을 체결하여 동서독 간의 계약공동체의 구성을 제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독정부가 제시한 초안을 보면 동서독 간의 계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양쪽에서 동일한 인원이 참여하는 정치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양국의 수상이 위원회의 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정부와 의회에 정책을 제안, 추천하도록 하며, 동서독이 동시에 준비를 축소하고, 1990년 연내에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경제 및 화폐연합을 실현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만 계약공동체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동독이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독이 지원해 주기

.....

⁸ 10-개항-프로그램-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문서번호 6).

⁹ 계약공동체는 일종의 국가연합을 구성하자는 제안이었다(문서번호 6 참고).

¹⁰ 루데비히(Ludewig) 국장이 자이티스(Seiters) 연방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문서번호 7).



를 요구하기도 하였다.¹¹

동독의 모드로우 정부의 발표를 받고 난 서독정부는 하루 후인 1990년 1월 18일에 ‘동서독 선진우호협력협약’에 관한 서독정부의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도 서독정부는 하루 전에 동독정부가 발표한 초안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가 존재함을 밝히고, 계약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경제, 공동 인프라, 환경 보호, 법제도, 노동 및 복지 분야에 공동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는 양국 간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서독 간에 이미 존재하는 검문위원회, 교통위원회, 국경위원회와 같은 공동위원회들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하였다.¹²

1990년 초 동독주민, 특히 많은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서독이주로 인해 동독 지도부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독정부가 동독정부를 향한 방식은 인상적이다. 실제로 1990년 1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 소련이 독일통일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한스 모드로우가 1990년 2월 1일에 ‘하나된 조국, 독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독일통일 계획안을 사통당 상임위원회 의장단에 제출하였을 때에만 해도 그는 동독의 변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안은 1957-1958년에 동독에서 만들어진 (중립적) 독일 연방을 위한 계획에 기반을 둔 것으로, 동서독이 모두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립국이 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제1단계에 양국이 경제연합, 화폐연합, 교통연합과 함께 연방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선린계약공동체를 구성하고, 제2단계에는 양국 공동의 의회, 행정부를 포함한 공동 조직과 기관을 갖는 국가연합을 구성한 후 제3단계에 연방제에 기초한 통일된

¹¹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협약-동독정부 초안(문서번호 14).

¹²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서독정부 초안(문서번호 15).

독일국가를 완성하자는 것이었다.¹³

이때에도 한스 모드로우의 동독이 붕괴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통일이 실현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여전히 동독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었다. 1992년 여름 그는 “동독이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중국에 달해 있었고 따라서 통일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지 않았는가?”라는 자유대 정치학과 교수들의 질문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동독은 계속 존재할 수 있었다. 당신도 쿠바나 북한의 존속에서 보지 않는가?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배반하고 팔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동독은 건재했을 것이다”¹⁴라고 답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를 본다면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배반해서 동독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동독주민들이 더욱 더 빠르고 본질적인 변혁을 원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당시 동서독의 장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지만 동독사회에서 전개되는 급격한 변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문제는 단계적인 통합을 염두에 둔 이러한 모든 논의들이 동독사회가 거의 통제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동서독 간의 빈부격차가 분명히 드러나자, 많은 수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서독에서도 노동시장과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동독의 전문인력이 대거 이주하면서 동독경제와 사회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주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벽이 무너지고 여행이 자유화된 상태에서 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동독을 취업과 수입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구축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뿐이었다.

.....

¹³ 모드로우의 계획-‘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문서번호 16).

¹⁴ 베를린 자유대학 오토-주어 연구소 1992년 여름 세미나에서 헬무트 바그너 교수와의 대화에서.



그러나 양국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독일통일의 주역들과 실무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는 시간의 부족이었다. 이러한 시간적 압력 하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대두한 것이 화폐통합이었다.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와 결정

독일통일연표를 보면 독일에서 화폐통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의는 이미 1989년 말에 있었다. 사민당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급변하는 동독의 상황에 대처하고 무엇보다 거대한 이주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는 화폐통합 외에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폐통합 방안을 먼저 구체적으로 이슈화한 쪽은 서독의 사민당 원내 재무대변인이었던 마테우스 마이어 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1990년 1월 19일에 오토 에브네트와 동일한 시각에서 신속한 화폐통합만이 대량이주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연방정부의 기본입장이 조속한 화폐통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방재무부가 제시한 ‘동독경제의 회생을 위한 10개 방안’의 기본적인 골자도 조속한 화폐통합은 아니었다.¹⁵ 그리고 1990년 2월 8일까지도 연방정부의 경제장관 하우스만은 경제 및 화폐통합에 관한 3단계 계획을 발표했었다.¹⁶

그런데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이 3단계 통합방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990년 2월 7일에 연방정부는 내각회의에서 화폐통합을 조기에 실시하

.....
¹⁵ 10개항 프로그램(문서번호 13).

¹⁶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의 시각(문서번호 25).



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2월 8일에는 헬무트 콜 수상과 연방정부의 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공동으로 화폐통합을 조기에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발표하면서 사유재산의 경우 1:1, 그리고 나머지는 2:1의 비율로 교환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제장관과 재무장관이 같은 날 서로 다른 방안의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연방정부 내에서 어느 부처가 통일과정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지 잘 보여준다. 경제·화폐통합 과정에서는 경제부가 아니라 연방재무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이유에 관해서 당시 수상청의 경제국장으로 독일통일 과정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연방경제부가 재무부만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회상한다. 1990년 1월 초까지만 해도 경제부와 재무부 어느 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재무부가 신속하게 정책안을 제시한 반면에 경제부는 그 때까지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무부가 통일과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⁷

실제 헬무트 콜 수상이 수상청의 실무진과 연방재무부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는 절대 동독 및 서독 간 어떠한 협상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지 미국, 유럽연합, 소비에트연방과의 외교정책에 관한 방안을 모색할 때에만 연방재무부의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 그만큼 테오 바이겔 장관이 이끄는 연방재무부가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테오 바이겔은 서독정부를 구성한 연립내각에서 기민당과 자매당인 바이에른주의 기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그가 갖는 개인적인 비중도 중요하였다. 그것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콜 수상의 황태자로 불렸던 내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¹⁷ 루데비히 자서전 Johannes Ludwig, Unternehmen Wiedervereinigung. Von Planern, Machern und Visionaern. Osburg-Murmann Publishers, 2015, p.43.

연방재무부 내에서는 호스트 쾰러¹⁸ 연방재무차관이 틸로 자라친 국장에게 1:1 교환율을 바탕으로 동독지역에 서독의 화폐를 도입하는 구상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¹⁹ 이 시기에는 이미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들도 함께 화폐통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폐교환비율에 관해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을 때이다. 그리고 동독에서는 “도이치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도이치마르크에게 간다”라고 외치는 동독주민들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초 서독의 경제전문가들은 화폐공동체의 도입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은행 총재와 독일의 경제 5현으로 불리는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경우 1990년에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²⁰ 그들은 화폐통합은 동독이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를 통해 연방정부가 원하는 대량이주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경제 5현은 나아가 1990년 2월 9일에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²¹:

“저희들은 조속한 화폐통합을 통해서 동독인들의 대거 이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수준이 곧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동독주민들에게 불어 넣어 그리하여 이들을 고향 땅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독측이 이를 겨냥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즉각적인 실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

¹⁸ 호스트 쾰러는 2000년에 IMF 총재 그리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¹⁹ 10개항 프로그램(문서번호 13).

²⁰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문서번호 19).

²¹ Brief des Sachverstaendigenrates vom 9. Februar 1990 an den Bundeskanzler: Zur Frage einer Waehrung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in>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472, pp.306-308.



를 쌓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이미 특별평가서에서 자세히 제시하였습니다. 화폐통합과 경제개혁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연방정부의 성명서는 무리없는 화폐통합에의 길을 펼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순서로 이 전환과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절대 화폐통합부터 먼저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수십년 간의 부실경제로 말미암아 동독은 통화초과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교환시킨다면 그렇지 않아도 필요 이상으로 높은 동독 마르크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며, 그것이 화폐통합이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독 경제체제의 유산을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활용가능 자본을 새로운 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출한 특별평가서에서 우리는 초과통화의 해소방안으로 우선 동독의 국유재산을 예금자들에게 매각하여 이들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서독 마르크의 도입은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화폐통합과 더불어 생활수준 역시 서독과 균등해질 것이라는 그릇된 착각을 갖도록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단지 희망사항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소득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뒤쳐져 있습니다. 물론 생산성의 증가와 더불어 임금 및 연금 또한 대폭 인상될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실질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선결조건이 사전에 충족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

다. 그런데 화폐통합을 통해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단일통화는 동서독 간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동독주민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정부가 이를 쉽사리 거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명목임금은 생산성 증가율 이상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동독에서 산업입지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아주 어렵게 되고, 서독으로부터 자본유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 화폐통합이 동독에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은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동독통화의 안정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급격한 투자증대란 실제 경제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동독의 가격구조체제가 왜곡되어 있으며 투자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화폐통합을 실시할 경우 이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독의 입지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화폐통합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 때에는 냉정한 현실이 도처에서 기세를 떨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주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경제 5현들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서독의 경제전문가들은 서독경제 제도를 동독에 도입하여 동독경제를 구조개혁하기 위해 단계적인 방안을 선호하였다. ‘경제 및 화폐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경제개혁이 완전히 실시되고 난 뒤, 동독 마르크가 국제시장에서 태환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통화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 성급하게 화폐통합을 시행하면 서독의 안정된 통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었다.



연방정부의 경제장관 하우스만이 구상한 3단계 경제 및 화폐통합 방안을 보면 경제부의 관료들도 경제전문가들과 시각을 공유한 것을 볼 수 있다.²² 하우스만을 비롯하여 단계적 통합 모델을 구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1992년 말까지 동독의 경제구조가 전환되고 국제시장으로 개방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때까지 동독이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서독 마르크에 대한 동독 마르크의 환율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달리 하이너 플라스벡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독 경제학자 그룹 또한 화폐통합이 아닌 단계적인 경제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²³ 그 방안은 사회정책상 측면지원 하에서 가격형성의 자율화와 임금정책의 자율화 그리고 장기 투자시설 구입 시 법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방안의 특색은 갑작스런 화폐통합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구조전환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시장요소를 도입하여 동서 간의 생산성 격차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논지이다. 화폐통합을 먼저 추진하지 않고 동독정부의 통화주권을 유지해 주면 환율정책을 통해 국제경쟁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질경제의 발전이 거의 동일한 선상에 도달하였을 때에 비로소 화폐통합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물론 이론적으로 분명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제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난 동독정부가 단계적으로 주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한스 모드로우의 동독정부가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992년에도 그는 고르바초프

²²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의 시각(문서번호 25).

²³ Heiner Flassbeck u.a. Reform der Wirtschaftsordnung in der DDR und die Aufgaben der Bundesrepublik, in: DIW-Wirtschaftsbericht 1990년 6호.

가 배신했기 때문에 동독이 붕괴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과연 당장 서독 마르크를 갖게 해달라고 외치는 동독주민들의 요구를 어떤 정치가가 무시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단계적으로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을 실시하는 것이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통일 당시 화폐통합 논쟁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브레멘대학교 경제학자 루돌프 힉켈 교수는 199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단계적인 경제발전과 화폐통합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실시하였을 경우 통화정책상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동독 자체의 통화체제는 설사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 이미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동독 통화의 태환성이 보장되어야만 했다. 다시 말해 동독 마르크를 다른 통화로 자유롭게 교환시킬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서독 간에 어느 정도 안정된 환율이 보장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것은 결국 동독 마르크를 지닌 사람들이 안정성 높은 서독 마르크를 갖기 위해 대거 환전하는 사태를 가져왔을 것이다. 동독에서 벌어들인 동독 마르크는 즉시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서독의 연방은행은 동독 마르크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서독 마르크를 매각하여 동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서독 마르크의 통화량을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서독의 안정도 위협받았을 것이다. 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한 통화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다.

단계방안의 일환으로서 동독 마르크는 서독 마르크에 비해 현저한 가치하락을 겪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 가치하락은 취약한 동



독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유지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독으로 수입되는 서방제품의 가격이 높아져서 당시 동독경제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던 투자제품 수입도 어려웠을 것이다. 주민들이 선망하던 서독의 소비제품은 저임금을 받는 동독인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었을 것이다. 서독의 노동시장이 바로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임금 또한 계속 상승하였을 것이고 기업의 투자능력은 더욱 약화되었을 것이다. 막대한 잠재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악순환을 계속 겪었을 것이다. 결국 단계적 통합방안은 오스트리아 모델이 아니라 급격한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폴란드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²⁴

히켈과 프리베는 나아가 단계적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독경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높은 은폐된 실업률을 감축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동반해야만 하며, 단계적으로 가격보조제도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조치를 과연 민주적으로 선출된 새로운 동독정부가 관철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본다. 오히려 이 개혁방안 자체가 과거지향적인 무리들의 거부와 반감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 독일정부가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채택하였다더라면 오히려 체제전환 과정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만 했던 구조조정 및 적응과정이 지연되면서 구조보전대책으로 전락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자신 있게 평가한다.

실제로 헬무트 콜 수상은 1990년 2월 7일에 동독정부에 화폐공동체의 도입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고²⁵, 2월 9일에 경제 및 화폐 통합

²⁴ 화폐통합 대신 동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문서번호 20).

²⁵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문서번호 17).

설치를 위한 제안사항을 동독정부에 전달하였다. 콜 수상은 이때 사유재산,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독일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의 교환비율을 1:1, 모든 기타 자산에 대한 교환비율을 1:2로 약속하였다.

경제·화폐통합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진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단계적으로 구조를 변형시켰을 경우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전격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히켈은 본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1990년 당시 독일정부가 선택한 신속한 화폐통합 외에 다른 무리 없는 대안은 없었냐는 질문에 당시 다른 대안은 없었다고 본다 고 답한다.

그러나 히켈교수가 전적으로 헬무트 콜의 화폐통합정책을 무조건 지지한 것은 아니다. 1990년 2월 초, 즉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는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에서 강연하면서 콜 정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였다.²⁶ 그 이유는 콜 정부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독과의 화폐공동체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도 얻을 수 없는 위험부담이 높은 새로운 실험의 장에 들어서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991년에 그는 콜 정부가 화폐통합의 결과를 무책임할 정도로 간과하였고, 그로 인해 1년 동안 정부가 장기적인 전략도 없이 임시미봉책 업무활동만 실시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콜 정부가 화폐통합의 결정과 더불어 미리 예견했어야만 했던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헬무트 콜 정부가 실시한 전격적인 화폐통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재정의 민간자본으로의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막대한 규모의 이전지출 방안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이전지출의 규모를

.....

²⁶ 화폐통합 대신 동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문서번호 20).



절대적으로 과소평가했다고 그는 비판한다. 화폐통합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완전히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일비용문제와 이와 관련된 재정분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화폐통합의 파급효과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오히려 조기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 사람들을 독일통일을 망치는 집단으로 몰아 세웠다. 시민당의 수상 후보 오스카 라퐁텐이 그중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되었다.

1990년 전반기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시화되면서 서독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통일을 경제적인 이득관계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1990년 초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에 경제전문가로 참가하였던 칼 쉴러 교수의 발언을 통해서 잘 대변된다.

“통일은 두 개의 대기업을 통합하여 결국에는 환상적인 이윤을 내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독일통일을 마르크와 페니히로만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독일통일의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물어야만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연방주의의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지 않는가.”²⁷

.....
²⁷ Waigel, Theo/Schell, Manfred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Vom Mauerfall bis zum Kaukasus. Die deutsche Währungsunion. München 1994, p.10.

화폐교환비율

1990년 2월 9일 콜 수상이 화폐통합에 관한 서독 연방정부의 제안을 동독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조기 화폐통합이 가시화되었다. 그렇지만 동서독의 화폐를 어떤 비율로 통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9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적절한 화폐교환율에 대한 논의가 고조에 달했었다.

연방정부 내에서는 1990년 1월 말에 재무부의 차관 호스트 쾰러의 주도로 킬로 자라친 국장이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화폐통합 비율을 1:1로 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선호되었다. 당시 연방수상청의 분위기를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1월 말, 2월 초로 돌아가 보자. 자라친이 제출한 문서를 통해 동독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동서독의 화폐를 1:1로 교환하는 것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동독의 임금과 생산성 모두가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하면 그 정도가 적절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다. ... 1월 30일에 열린 연방재무부의 회의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동독의 경제와 재정문제에 관한 자라친의 분석을 근거로 이제부터는 동독과의 화폐통합에 관해 논의해야만 한다는 시각이 주도하게 되었다. 수상청의 경제담당인 나는 그것이 적



절한 시각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상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나의 보고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가 어느 순간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 2월 5일에 연방재무장관과 수상은 다음 날 동독에게 경제 및 화폐공동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²⁸

헬무트 콜 수상이 이 시기에 사유재산,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독일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의 교환 비율을 1:1, 모든 기타 자산에 대한 교환비율을 1:2로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힌 이유가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1990년 3월 18일에 동독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자유총선거가 실시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동독 내에서 사민당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59%), 사회주의통합당의 후신인 사회주의민주당이 12%, 그리고 기민당이 11%, Neues Forum이 4%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물론 한번의 여론조사만으로 유권자 전체의 동향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위성정당이었던 기민당보다는 새로이 구성된 사민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콜 수상은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의 시작을 발표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동독체제 내에서 위성정당의 역할을 했던 동독의 기독교민주당, 즉 기민당(CDU)을 선호하지 않았던 동독주민들의 분위기를 일거에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3월 18일의 선거에서 기민당이 승리하고 기민당 당수였던 로타 드 메지에르가 총리로 선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과는 관계없이 199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독일의

.....

²⁸ 루데비히 자서전 Johannes Ludwig, Unternehmen Wiedervereinigung. Von Planern, Machern und Visionären. Osburg-Murmann Publishers, 2015, p.44.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절한 화폐교환율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²⁹ 논의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보면 화폐교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책정과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 그리고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이인지출문제 등이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교환비율을 콜 수상이 선호하는 것처럼 1:1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방은행과 다른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2 또는 1:4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1:1의 교환율로 동서독의 화폐를 통합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였다. 1989년 11월 암시장에서의 동서독 화폐교환비율은 1:16이었고, 1990년 1월에 서독을 여행하는 동독인들이 서독 마르크를 무제한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율은 1:3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이전의 3년 간 동서독 간의 평균 환율은 서독의 환전시장에서 1:8, 동독의 외환거래소에서 1:6.7 정도였다.

동독의 외환시장

1990년 6월 30일까지 동독 내에서 유통되던 동독 마르크는 내국통화로서, 외국으로의 대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외화로 교환될 수도 없었다. 동독정부는 특히 여행자들에 대해 동독 마르크의 반입, 반출을 금하였다. 그러나 동독 밖에서는 서베를린과 서독에서 일찍부터 동독 마르크의 환전거래가 이루어졌다. 국경 개방 이후에 생긴 거리의 시장에서 특히 동독 마르크의 거래가 성행하였는데, 액수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었다.

.....

²⁹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문서번호 21).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림 장관의 서한-화폐교환비율의 사회적 의미(문서번호 26).



동독 마르크 환전시장은 항상 정치상황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장은 국경개방 전까지 동서독 여행자들이 가져오는 현금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다. 동독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이 시장에서 형성된 동서독 마르크의 교환율은 100 동독 마르크에 12.50 서독 마르크였다.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환전한 서독 마르크로 서독 또는 동독 내에서 특별허가를 받고 운영되던 상점 또는 암시장에서 서구제품을 구매하는 데 소비하였다. 동독 마르크의 수요자는 주로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들이었다. 이들은 동독정부가 규정한 강제 환전금액 이상의 동독 마르크를 유리한 비율로 교환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동독법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행위였다. 1987년에서 1989년까지 외환거래소에서 거래된 마르크화는 15 서독 마르크 대 100 동독 마르크의 비율로 거래되었다. 반면 동독정부는 최소 환전의무금액에 대해서는 1:1의 교환비율을 적용하도록 강요하였다.

1989년 11월 9일 장벽 개방과 더불어 동독 마르크의 거래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동독 내 예금구좌를 청산하고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과 서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려는 동독주민들로 인해 동독 마르크의 공급량이 급증해서 1989년 11월 중순까지 동독 마르크화는 100 동독 마르크 대 7 서독 마르크라는 덤핑시세를 보이기도 했다. 1990년 1월부터 불기 시작한 수요증대 현상은 동독 마르크 시세를 한동안 대폭 올려놓았다. 이때 동독 마르크의 매입자는 특정 동독 물품 또는 동독정부의 가격지원을 받는 물품들을 유리하게 구입하려는 서독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화폐통합설이 구체화됨과 동시에 투기성 매입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도입된 화폐통합 오용방지 규정은 이러한 투기성 동독 마르크 구매를 저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동독을 방문한 서독인들에게 1990년 1월부터 1:3의 비율로 동독 마르크를 무제한 매입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비공식 환전시장에도 암암리에 하한선이 형성되게 되었다.

환전시장에서의 환율이 화폐통합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진정한 자유시장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일종의 암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전시장이라하면 대규모 외환시장의 일부에 속하고 이곳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유통 및 고정자산의 거래와 가격 및 금리추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동독 마르크는 외환시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동독의 국제교역은 주로 상호 간의 협정 및 청산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독과의 물물교역은 청산단위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동독정부의 조치로 인해 현물 및 금융 자유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환율시세를 책정할 수 있는 기초토대가 없었다. 동독법이 허용하지 않는 현금 반입과 그로 인한 위험부담 그리고 동독의 물품생산과 용역사업 등의 부진으로 인하여 동독 마르크화의 외환가치는 실제 내수 구매력에 비행 장기간 과소평가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연방은행 월례보고서 1990년 7월호, “Wä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부록)

동독과 서독의 물가를 고려하여 화폐의 구매력을 근거로 환율을 산출한 연구결과들은 100 동독 마르크의 가치를 88 서독 마르크에서 132 서독 마르크 정도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의 문제는 동독과 서독의



소득 수준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동독에서 시행된 가격보조금제도 때문에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화폐통합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발권은행인 연방은행이었다. 그런데 연방은행의 중앙은행위원회는 1990년 4월 2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³⁰.

“서독 마르크를 새 통화로 도입하자는 동독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제안과 관련하여, 연방은행은 서독정부로부터 국가조약의 일환으로서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화폐교환법 초안을 제시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독일 연방은행의 중앙은행자문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1990년 3월 29일에 가진 회의에서 화폐교환법에 대한 기준을 결정, 이를 연방정부에 전달하였다. ...

연방은행 중앙은행자문위원회는 정부를 위한 추천방안을 작성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특히 유념하였다. 서독 마르크가 새 통화로 동독에 도입됨으로 해서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서독 마르크가 새로운 통화로 동독에 도입될 경우, 동독은 완전태환이 가능한 통화를 구비하게 되는데, 이로써 동독경제는 모든 산업국가들과 경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화폐교환 시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현 상황은 현실적인 환율시세에 입각한 교환율 책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동독 마르크 대비 서독 마르크의 공식 환율은 4.4:1 내지는 3:1 또는 2.4:1 등으로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1:1의 교환율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1:1 교환비율이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될 경우 이것이 동독경제에

³⁰ 문서 중앙은행위원회 결정 참조. Vorschlaege des 독일 경제 1990년-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 Zentralbankrats zu einem Umstellungsgesetz, in: Pressenotiz der Deutschen Bundesbank, 1990년 4월 2일.

안겨줄 부채와 비용의 과중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도 힘들 것이다. 동독 스스로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기업부채에 대한 교환비율은 2:1 내지는 2.5:1로 조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1:1로 교환비율이 책정될 경우 동독정부는 주택사업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상환의무도 결코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동독 금융기관들의 자산항목에 대해서는 2:1, 부채항목, 즉 예치금과 유통현금에 대해서는 1:1의 비율을 적용시킬 것 같으면, 국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500-1,000억 서독 마르크 상당규모의 차액보전청구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1:1 비율로 교환된 부채항목에 대한 이자를 현실 금리시세에 맞게끔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되게 된다. 동독정부의 부채 상태는 지금도 이미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연방은행은 현금과 예치금에 대한 2:1 교환비율을 부담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1 동독 마르크의 현재 가치가 결코 1 서독 마르크가 안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금에 대해 2:1의 교환비율을 적용시킬 때 절약해서 모은 예금의 실제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동독의 예금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연방은행은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동독주민 1인당 최고 2,000 동독 마르크까지 1:1의 비율로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4인 가족은 최고 8,000 마르크까지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동독주민들의 예금이 대부분 1:1로 교환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은행은 이런 예외규정에 따른 재정부담 정도는 통화정책을 통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교환된 서독 마



르크에 대한 처분은 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연방은행은 동독의 금융기관들이 서독의 금융기관들처럼 동독주민들을 위한 장기 고금리 투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아가 동독정부가 국유재산을 주식화하여 일반예금자들에게 공개할 것도 제안하였다.

임금 및 연금 등에 대한 교환비율은 동독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 가격 및 비용구조가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약 500억 동독 마르크 규모의 소비재에 대한 가격보조로 인해 발생한 기형적인 가격체제를 화폐교환 실시 전에 폐지시키고 가격을 자율적으로 인상, 조절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 제안을 따를 경우 임금과 연금도 동시에 인상되어야만 한다. 만일 이렇게 인상된 임금을 1:1의 비율로 교환하도록 해 줄 경우,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동독의 경제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임금 및 연금에 대해서도 2:1의 교환비율을 책정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그로 인해 현재의 임금이 절반으로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서독의 마르크가 도입되면 오히려 실질임금이 종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화폐교환 실시 이후의 임금에 관한 계약은 각 기업 및 지방단체들이 근로자 측과 직접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교환비율이 1:1로 책정되고, 왜곡된 가격구조가 정상화될 경우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가격인상과 임금인상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위험도 높다. 서독 마르크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은행으로서 이와 같은 악순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연방은행 중앙은행자문위원회의 결의사항

본 위원회는 동서독 국가의 정치적 통합의지에 따라 동독지역에 대한 서독 마르크 통화권 확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1, 3, 6항들은 필수사항으로, 그리고 제2항은 추천사항으로서 국가통합규정으로 받드시 반영시키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제1항: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교환할 때 부채에 대해서는 2:1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2,000 서독 마르크까지 1:1로 교환하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한다. 교환된 서독 마르크에 대한 처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제2항: 2,000 마르크 이상의 예금소지자에 대해서는 양측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이들에게 신탁청재산과 사유화재산에 대한 지분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3항: 국가조약은 동독 통화권 내에서 연방은행법 및 관련 규정들의 적용을 보장한다. 또한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자문위원회 결정사항들이 동독에서 관철되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

제4항: 연방은행이 위의 과제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베를린에 1개의 한시적 행정기구와 동독 전 지역에 약 15개의 지점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5항: 동독에 금융기관법을 도입하여 서독 및 외국 신용기관들의 지점 설치를 보장하도록 한다. 의무금리규정 및 외환제한규정을 폐지하도록 한다.

제6항: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연방은행 소속 중앙은행자문위원회의 제안서에서도 서독 마르크의 안정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일과 같이 중요



한 민족적 과제에 부딪힌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정책, 특히 화폐 및 통화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화폐의 안정성부터 생각하는 것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일 역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2013년의 인터뷰에서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독일인들에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발생하였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몽이 일종의 민족적 집단 기억으로 아직까지 강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³¹ 1920년대의 역사적 경험이 집단적인 기억으로 남아서 1990년 통일을 앞둔 독일에서 진행된 화폐통합에 대한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1990년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1:1의 비율로 동서독의 화폐를 교환할 경우 연방은행 중앙은행자문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서독 마르크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었다.

그러나 연방은행과 경제전문가들이 선호한 2:1의 교환비율은 동독국민의 분노와 반대시위를 불러일으켰다. 동베를린 그리고 다수의 동독 도시에서 발생했던 시위의 구호는 “일대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다”였다. 동독국민들은 2:1의 교환율이 적용되면 무엇보다 자신의 실제임금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였었다. 1988년 당시 동독의 평균적인 실제임금은 854 동독 마르크였고,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실제로 서독 근로자의 5분의 1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주민들은 1:1 교환율을 마치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으로 간주하고, 연방은행의 방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연방은행이 2:1 비율로 화폐교환을 실시하기 전에 임금조정과 사회보장보험금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 분노한 동독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에는 1:1의 교환율을 요구하는

.....

³¹ 독일통일총서 4권 인터뷰 참조.

슬로건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총파업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동독 내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서독 연방정부의 노동부장관 노르베르트 블림(Norbert Blüm)은 3월 27일에 콜 총리에게 서신을 통해 ‘화폐교환 비율이 1:1 이하로 놓이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거부반응과 불안정한 정치적 연쇄반응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³² 그리고 1990년 3월 18일의 선거에서 승리한 로타 드 메지에르가 이끄는 동독 기민당이 보수연합의 제1정당이 되고 드 메지에르가 동독 2기 과도정부의 수상이 된 후에 화폐통합을 위한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다.

드 메지에르 수상을 비롯한 동독정부는 시종일관 1:1 교환비율 요구 입장을 고수하였다.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 동독 사민당(SPD) 당수는 이러한 1:1 교환비율을 사민당 정치참여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는 마찬가지로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며 1990년 4월 19일 정부성명에서 밝힌 1:1 화폐교환비율을 기본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약 1,900억 마르크에 달하는 개인 예금 총액을 1:1 비율로 교환하게 될 것을 감안해 볼 때 서독의 경제전문가들과 연방은행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통화과잉을 우려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1 교환비율을 바탕으로 기업부채를 평가할 경우 채무원리금 상환 시 일반적 자본시장 금리를 예상해야 하는 수많은 기업의 재정적 파산을 두려워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급했던 것은 서독 내에서 연방정부와 연방은행 간에 내부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었다. 조기 화폐통합 논의 자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를 표명하고 그것이 매우 허황된 것이라고 비난하던 연방은행 총재 칼 오토 뵐은 콜 수상이 화폐통합을 결정하고 난 후 연방정부의 조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화폐통합 결정 그 자체는 연방정부

.....

³²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림 장관의 서한-화폐교환비율의 사회적 의미(문서번호 26).



의 정치적 결정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연방정부가 져야한다”고³³ 비난하였다.

1990년 5월 2일에 동독 및 서독 정부수반 간 협상을 통해 동서독이 체결할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의 도입에 관한 조약, 즉 제1차 국가조약의 최종안이 합의되었다.

.....
³³ Auszuege aus Presseartikel 12/9, p.1. 사실 서독의 연방법 13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통화정책상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 연방은행장이 항상 참여해야 하지만, 환시세의 책정과 통화권 확장에 대한 결정은 연방정부의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화폐통합 과정에서 연방은행이 독자권을 침해받았다고 비난할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 문제는 오히려 화폐통합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은행에서 제안한 2:1의 화폐교환율도 관철시키지 못한 연방은행이 통일 이후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하는 것이었다. 연방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국가적인 과제의 해결을 지원할지 아니면 화폐통합에 관한 논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통화 긴축정책을 통해 타협 없는 물가안정을 추구하는가하는 것이었다. 연방은행은 이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취하면서 독일통일 초기의 호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받았다.

화폐통합조약

1990년 5월 18일에 동독과 서독은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의 도입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명 화폐통합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동서독 공동의 경제질서로 확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³⁴ 서독의 마르크를 공동화폐로 하는 단일통화권을 형성하고 양측 근로자의 권리와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동법과 사회보험 원칙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조약의 부속문서인 기본방침에 관한 공동의정서에서 동독은 서독의 법적, 제도적 기본조건을 수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화폐통합에 관한 조항을 보면 화폐의 가치 안정과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대전제로 서독의 마르크를 공동통화로 하는 단일지역을 형

.....

³⁴ 화폐통합조약 최종안이 성립되기까지 만들어진 초안과 주변국들의 요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관계(문서번호 28).
 경제화폐사회통합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문서번호 29).
 동서독정부가 작성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의 실무문서에 관한 소련의 입장표명-동독정부에게 제시(문서번호 30).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문서번호 31).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과 제안(문서번호 32).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문서번호 34).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입장(문서번호 35).



성하면 1990년 7월 1일부터 서독의 마르크가 동독지역에 법정통화로 도입된다고 명시하였다. 동독주민의 임금과 봉급, 보조금 및 연금, 집세, 임대료 및 기타 정기적 지급액 등 모든 flow를 1:1의 비율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동독 마르크로 된 채권, 채무, 즉 모든 stock의 교환율은 원칙적으로 2:1로 책정하였다. 다만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인예금의 경우 연령에 따라 14세 이하 어린이는 1인당 2,000 마르크, 59세 이하는 4,000 마르크, 59세 초과 중장년의 경우 6,000 마르크가 허용되도록 하였다. 동독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이전의 예금은 2:1, 그 이후의 예금은 3:1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모든 화폐교환은 동독 내의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서독의 마르크가 단일통화로 동독지역에 적용되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독일 연방은행 이사회가 내리기로 합의하였다.³⁵ 동독의 재무장관은 연방은행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독정부가 통화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며 동시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동독정부는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 연방은행과 사전협의해야만 하며 중요한 사안의 경우 연방은행 총재가 함께 결정하게 되었다.

연방은행은 동독의 정부와 행정기관,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베를린에 연방은행 이사회 직속 임시관리국을 설치하고 동독 내에 15개 도시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이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은 동독정부가 제공하였고, 동독 내에서 연방은행은 준외교기관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았다.

동시에 동독정부는 연방은행의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동독의 일원적 은행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여, 서독과 같은 이원적 은행구조

.....
³⁵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령권을 연방 금융감독원에 위임하는 규정(문서번호 49).

를 도입하고, 자유로운 금융자본시장을 형성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 도입에 관한 국가조약

제I장 기초(제1-9항): 1990년 7월 1일부터 독일 마르크(DM)는 공동화폐, 연방은행은 발권은행이 된다. 이전의 모든 동독 마르크(DDR-Mark) 관련 의무 및 요구사항들은 독일 마르크로 변경된다. 동독에서는 환경보호를 고려한 사회시장경제가 도입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안정이 보장된다. 이와 관련된 동독 헌법의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보험감독청은 동독에서도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관청은 상호간 업무를 지원한다. 동독에는 자유, 사법상의 중재판정법이 도입된다. 노동재판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동등한 재판소에서 결정권을 위임한다. 서독과 동독정부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제II장 화폐통합에 대한 규정(제10항): 연방은행은 양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연방은행법 제12조). 동독 금융시장은 민간 경제 신용은행체제, 자유로운 금융 및 자본시장 그리고 엄격히 규제된 이자율체제를 도입한다. 봉급, 임금, 장학금, 연금, 임대료, 임차료 및 기타 지급수단은 1:1로 전환한다. 다른 모든 의무사항과 관련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2:1로 전환한다. 이는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계좌를 둔 사람과 직장에만 적용된다.

제III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제11-16항): 동독은 고정가격, 높은 고용률, 현대적인 작업장과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1951년 이후 서독과 동독 사이에 존재했던 무역거래는 철폐되고 내독 규제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제거된다. 동독은 국제경제를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상호경제원조평의회 국가들과의 관계는 확대된다. 동독은 서독과 함께 동독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IV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제17-25항):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은 국가 감독 하에 있는 자치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특히 사업자와 고용인에 의해 반반씩 부담된다. 1991년 1월 1일까지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형성된다. 보험의무 및 의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 호봉 등은 서독의 사회보험법에 따라 제정된다.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이 도입되고 이에 따르는 직업교육과 재교육이 실시된다. 이때 특히 여성과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들이 고려된다. 동독 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은 서독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병고 시의 보상지급 등 포함). 이전까지 획득한 연금 청구권 및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은 동독의 임금과 봉급 수준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제V장 국가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규정(제26-34항) 제26항(재정정책): 동독의 국가 예산은 서독의 예산구조에 맞게 조정된다. 동독 국가 예산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회 분야, 경제기업, 운수업, 독일 제국철도와 도이치포스트의 운영. 동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삭감: 예산 보조금의 철폐, 인건비의 삭감, 모든 지출내용의 검토 및 감사, 교육제도의 구조개선. 국유 재산의 구조개선 및 국가 예산상의 개선. 제27항(신용거래 및 채무):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의 차입한도는 1990년에 100억 DM에서 1991년에 140억 DM으로 제한된다.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1990년에 70억 DM과 1991년에 100억 DM의 차입한도가 적용된다. 제28항(서독의 재정 지급): 서독은 동독 국가 예산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220억 DM 그리고 1991년에 350억

DM을 지원하였다. 서독은 또한 동독 연금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7억 5,000만 DM 그리고 동독 실업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20억 DM, 1991년에는 30억 DM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1971년에 도입된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및 통관을 위해 지불하는 일괄 사용료는 더 이상 서독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서독은 또한 여행자 외화기금에 더 이상 불입하지 않는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제29항(공공 서비스): 동독은 서독의 연방 공무원 및 사무직 직원에 관한 법(Bundspersonalvertretungsgesetz)을 규정에 맞게 적용한다. 제30항(관세 및 소비세): 동독은 단계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조세법을 적용한다. 소비세의 제한규정은 철폐된다(담배 제외). 제31항(재산세 및 교통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서독과 동독 사이에 세금제한선 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주권은 간섭받지 않는다. 사전 세금 공제에 대한 권한은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에 귀속되는 매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일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해당 계약 상대자만 과세를 한다. 쌍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생활의 중심 정도 및 영업소의 위치에 따라 과세를 한다.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 상대방의 국내재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제32항(정보교환): 서독과 동독은 세법과 독점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33항(이중과세): 재산세와 교통세의 이중과세는 서독과 동독 재정장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방지하도록 한다. 제34항(재무행정의 구조): 동독은 서독 재무행정의 법에 상응하는 3단계 재무 행정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 및 관세 행정청을 설립한다.

화폐통합의 후속조치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이 분명해지면서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등장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다. 동독 최고인민회의와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도입하여 화폐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려고 하였다.³⁶ 동시에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금지하였던 동독헌법 12조가 폐지되고, 1990년 3월 1일에 설립된 신탁관리청 결의안을 대신하여 1990년 6월 17일에 신탁관리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화폐교환의 실시와 함께 서독을 여행하는 동독주민을 위해 지급되었던 여행환기금제도가 폐지되었다.³⁷

동독인을 위한 여행환기금

동독주민들은 1989년 11월 9일 장벽의 개방과 함께 자유롭게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여행비는 대부분 동독에서 1년에 한 번씩 1:1로 교환이 허용된 15 DM과 서독의 연방정부와

³⁶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문서번호 41).
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문서번호 42).

³⁷ 동독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문서번호 8).

지방단체가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인들에게 지불하는 환영비가 전 부였다. 환영비는 1년을 기준으로 첫 번째 방문일 경우, 1인당 100 DM을 지불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추가로 지원하였다. 연방정부는 12월 초 동독정부와 합의하여 서독을 방문하려는 동독주민들을 위한 여행환기금을 서독에 설치하였다.

1990년 1월 1일부터 여행환기금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서독을 방문하는 모든 동독인들에게 지급되던 환영비는 폐지되었다. 동시에 동독은 1989년 성탄절부터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들에게 강제로 부과되었던 최소환전의무규정을 폐지하였다. 1990년 1월 2일부터는 서독인들이 1:1의 비율이 아니라 1:3의 비율로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를 공식적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행환기금은 29억 서독 마르크를 넘어설 수 없도록 책정되었다. 그중 15억 서독 마르크는 서독 연방정부와 동독정부가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고, 연방예산에서 1990년도 환영비로 책정되었던 14억 서독 마르크가 추가로 지급되었다. 여행환기금을 통해 동독주민들은 최고 200 서독 마르크까지 동서독의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었다. 이때 100 서독 마르크까지는 1:1의 비율로 나머지는 1:5의 비율로 교환되었다. 결과적으로 차등교환비율의 산술적 평균치는 1:3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여행환기금으로 유입되는 동독 마르크는 차후 동독 내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에 지출하기로 동서독 정부는 합의하였다.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이 실시되면서 여행환기금은 폐지되었다. 화폐통합 전까지 기금을 통해서 환전된 금액은 총 21억 7,000만 서독 마르크였다. 이 중 연방정부가 16억 1,000만 서독 마르크



크를, 동독정부가 5억 6,000만 서독 마르크를 부담하였다.

여행비 환전은 주로 1990년 1월과 2월 두 달 사이에 이루어졌다. 화폐통합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1:5 교환비율이 동독인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조정될 조짐이 보이자 100 마르크를 초과한 교환금액에 적용되던 1:5의 교환비율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총 50억 3,000만 동독 마르크가 여행환기금으로 서독에 유입되었다. 이 중 42억 동독 마르크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위해 동독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이 액수는 화폐경제사회공동체가 실현되기 이전에 완전히 지출되었다. 나머지는 서독 마르크로 교환하여 1990년 후반 기 동독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연방은행 월례보고서 1990년 7월호, ‘Wä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부록)

나아가 서독의 연방은행은 1차 국가조약 10조 7항에 따라 동베를린에 임시관리소를 개설하고 동독중앙은행의 건물에 15개소의 지점을 설치하며 7월 1일에 실시될 화폐통합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하였다.

국가조약에 따라 1990년 7월 1일에 동독지역에 서독 마르크화가 단일통화화폐로 도입되는 절차는 실제로 연방은행에 의해 주도되었다. 화폐통합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연방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은행은 화폐통합의 기술적인 처리문제와 금융정책상 최적의 선결조건을 만들어 놓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수리학적으로 볼 때 엄청난 대작을 완성시켰다. 당시 연방은행은 화폐통합을 위해 소요될 250억 서독 마르크를 인쇄하기 위해 모든 지폐인쇄기와 주화제조기를 완전가동하였고, 비밀노선을 통해 동독지역의 15개 지점과 100여 개의 현금출납소로 운송되었다. 당시

1990년 6월 30일 밤에 현금운송을 담당하였던 연방은행의 한 간부는 인터뷰에서 현금을 운송하는 차량이 동서독의 국경을 넘었을 때부터 동독의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조금 이상한 기분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금운송차량이 국경에 도착하였을 때 동독경찰의 책임자가 텅 빈 고속도로를 가리키며 이 길이 모두 당신 것이니 달릴 수 있는 만큼 빨리 달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실제로 새로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³⁸

그런데 더욱 경이로운 사실은 이 과정이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독의 인민군 해체 작업이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것만큼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화폐통합에 수반되었어야 할 재정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많은 문제로 인해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화폐통합 가치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

³⁸ 헬무트 리트겐, 전 은행 현금통화국 국장. 2015년 7월 6일 인터뷰.

금융제도의 개편에 대한 연방감사원의 평가

독일이 통일된 지 25년을 기념하는 2015년에도 화폐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자주 언급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은행제도의 전환과정에서 서독 은행들의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역할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1995년 9월 27일에 연방감사원이 ‘구동독의 구채무청산과 동독-금융기관의 업무인수에 관한 보고서’(Bericht über die Abwicklung von Altkrediten der ehemaligen DDR und die Übernahme von Geschäften ehemaliger DDR-Kreditinstitute)를 발표한 이후 이 문제는 학계와 언론 그리고 연방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여전히 기밀문건으로 처리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방의회의 논의와 이 문서를 인용한 다른 문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방감사원이 가장 비판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동독의 금융제도를 개편한 후 화폐통합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구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취한 정책이 국고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³⁹

금융제도의 개편과 구채무에 관련된 문제는 화폐통합과 신탁청 그리고

³⁹ 연방감사원이 작성한 이 문서는 시중은행의 사업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동독의 구채무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되면서 이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다. 동독의 구채무-연방의회 질의와 응답(문서번호 70).

통일비용 모두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화폐통합과 직접 관련될뿐만 아니라 화폐통합조약에 이미 동독 금융제도의 개편과 연방은행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화폐통합의 일부로 다루기로 하였다.

앞에서 동독의 경제구조를 설명하면서 동독의 금융구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환이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금융구조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였다. 동독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자’ 또는 ‘청구권’과 같이 금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체제를 전환하면서 그것을 자본주의에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적용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화폐통합 이후 금융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990년 7월 서독의 연방은행이 발표한 월레보고서는 부록으로 동독의 은행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 1990년 4월에 동독의 드 메지에르 정부가 추진한 은행구조의 개편작업 과정에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와 청구권을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 그것을 자본주의 금융체제에서의 부채와 청구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출의 제공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제공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제공되었다고 언급하는 부분은 동독의 금융구조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패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 서독의 금융인들이 어떤 자세로 동독의 금융제도 개편에 임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의 은행제도

동독의 은행제도는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를 반영하였다.
1990년 3월 말까지 동독의 금융체제는 동독중앙은행과 그 지점 그



리고 소수의 특수금융기관으로 구성되었는데, 무역은행, 상업은행, 식품농업은행 등의 모든 금융기관 또한 중앙의 통제를 받았다. 이외에 저축금고, 농민상업금고를 포함하는 조합금고와 국민은행 등이 있었다. 이들 은행들은 동독중앙은행에 귀속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독중앙은행의 행정규제를 받았다.

국가통제 경제의 재정문제는 동독중앙은행에서 담당하였다. 1990년 4월 초에는 새로 신설된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이 이 분야의 사업을 동독중앙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았다.

이에 상응하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목, 즉 동독기업 및 주택사업에 대한 대출과 기업 및 보험업체의 예치금은 동독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분리되었다. 따라서 독일신용은행의 자산란에는 종전의 콤비나트와 국영업체 그리고 국영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청구권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부채란에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소규모 예치금과 동독중앙은행에 대한 은행 간 예치금이 주를 이루었다.

1990년의 재편과정에서 동독중앙은행에 의한 리파이낸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독일신용은행이 인수받은 대출이 이양된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저축금고는 조합금과 마찬가지로 주로 주민들의 저축예금을 수취하여 이를 다시 동독중앙은행으로 이전시키는 업무를 맡았다. 저축금고 분야에서도 자율적인 업무활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이 개인에 대해 대출을 제공한 것은 금융사업상 수익성이나 대부희망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 수단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게 소규모의 대출이 제공되었으며, 특정인물에 대해서는 사적 건축용자금이 지불될 수도 있었다.

예치금 다음으로 중요한 동독중앙은행의 자금원은 특수금융 기관의 의무예치였다. 이들 기관은 서방국가들 또는 코메콘 회원국들과의 재정문제 청산을 주로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일무역은행, 독일상업은행 그리고 대외무역업체들이 그런 기관들이다.

외국과의 지불 및 청산업무는 이들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기관을 통해 소요외화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밖의 다른 특수기관으로 식품 및 농업은행이 있었다. 이 은행은 농업생산조합 및 식품산업의 재정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농민 상업조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였다.

(연방은행 월례보고서 1990년 7월호, ‘Wae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부록)

연방은행의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동독정부는 이미 1990년 초부터 금융구조의 개편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동독중앙은행을 개편하는 작업이 그렇게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먼저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절한 법을 도입해야만 했다.⁴⁰ 특히 동독의 드 메지에르 정부가 1990년 4월 추진한 금융제도개편은 화폐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¹ 이 개편을 통해 동독에도 서독

.....

⁴⁰ Harry Möbis, Bekanntmachung über die Aufhebung von Rechtsvorschriften auf dem Gebiet des Bankenwesens und der Versicherung, 1990.03.08). Bundesarchiv, DC 20/9849, Bd. 5.

⁴¹ 동독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문서번호 10).
동독중앙은행 개정법(문서번호 22).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문서번호 24).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문서번호 47).



과 같은 이원화된 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독중앙은행은 명칭을 베를린중앙은행(Staatsbank Berlin)으로 바꾸고 서독의 연방은행과 같이 발권은행의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⁴² 그리고 동독중앙은행에서 분리된 베를린국립은행(Berlin Staatsbank)과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이 화폐시장과 자본시장 간의 중개 업무를 맡게 되었다.⁴³ 나아가 식품농업은행의 후신으로 베를린협동조합은행이 공익법인으로 새로이 설립되었다. 그 외에 다른 은행들은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화폐통합이 실시되었을 때 이들 금융기관들이 대차대조표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은 2:1의 비율로 전환되어 이들 금융기관들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었다.⁴⁴ 그 결과 화폐통합 이후 동독의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총 구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총 1,775억 마르크가 되었다. 이것은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되었다.

표 2-1) 동독 금융기관들의 구채무 청구권

(단위: 십억 마르크)

금융기관	구채무 청구권 Altkreditforderungen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 AG)	약 1,245억 마르크
독일대외무역은행(Deutsche Außenhandelsbank)	약 70억 마르크
베를린 협동조합은행(Genossenschaftsbank Berlin)	약 175억 마르크
베를린시립은행(Berliner Staatsbank AG)	약 115억 마르크
독일상업은행(Deutsche Handelsbank AG)	약 65억 마르크
저축금고와 국민은행(Sparkassen und Volksbanken)	약 105억 마르크

출처_ 연방감사원 1990년 9월 27일 보고서

⁴² 베를린국립은행법(문서번호 43).

⁴³ 그와 함께 대차대조표상 동독중앙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독일신용은행과 베를린국립은행으로 넘겨졌다. 동독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항목은 일반신용기관들의 적립금이었다. 이 적립금은 일반신용기관들의 자산으로, 이들 기관이 동독중앙은행을 통해 기업에 제공한 대출을 의미한다.

⁴⁴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산에 관한법(DM-대차대조법)(문서번호 50).

화폐통합 과정에서 대출의 교환율은 2:1이었던 반면에 저축예치금의 일부가 연령에 따라 1:1로 교환되었기 때문에 동독의 은행이 적어도 계산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상이한 교환율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화폐통합조약의 차액보전지출규정(Regelung von Ausgleichszahlungen)을 통해 보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⁴⁵ 1990년 7월 1일 이후 동독의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는 차액보전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차액보전청구권은 정부가 은행에 진 부채라고 할 수 있었다. 차액보전청구금액의 규모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화폐통합 당시 총 규모가 약 570억 마르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동독정부는 1990년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에 5%의 이자율을 정해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의미에서의 이자와 달리 국가예산에 의해 지불되거나 또는 완전히 탕감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화폐통합 이후 이 구채무 청구권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의미에서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1990년대 초 일반적인 시장이자율은 약 10%였다. 하루아침에 이처럼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구채무의 총액이 1992년에 100억 마르크 증가된 것이다.

동독중앙은행과 저축금고 그리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동독의 은행들은 모두 화폐통합 이후 서독의 은행에 매각되었다. 베를린중앙은행(Staatsbank Berlin)으로 개칭된 동독중앙은행(Staatsbank)의 자산은 1994년 10월 1일에 신용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 인계되었다.⁴⁶ 저축금고의 전환은 연방정부와 신탁관리청의 관여 없이 진행되었다.

저축금고는 18세기부터 독일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일반 시민을 위한 금

.....

⁴⁵ 화폐통합 과정에서 화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문서번호 51).

⁴⁶ 1990년 6월 29일에 도입된 베를린국립은행법에는 기본자산의 규모가 2억 5,000만 DM이라고 쓰여 있다. 이 은행의 업무는 차액보전기금의 관리와 화폐통합 과정에서 동독중앙은행과 일반시중은행 간의 예치금과 리파이낸스의 관리 그리고 외국과의 여신관리로 규정되었다. 베를린 국립은행법(문서번호 43).



용제도였다. 그런 전통은 분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동서독의 지역 마을 단위에 저축금고가 세워졌었다. 그러나 동서독에서 상이한 저축금고 관리운영체계가 자리를 잡았었다. 서독의 저축금고들은 연방주를 단위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았고, 동독의 저축금고는 국가계획경제의 한 단위로 동독중앙은행의 산하기관이 되었다. 화폐통합이 결정되었을 때 동독의 저축금고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서독의 저축금고 모델을 도입해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90년 6월 29일에 동독 법률관보를 통해 서독 저축금고의 모델을 따라 동독 저축금고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관을 발표하였다.⁴⁷ 동독지역 저축금고의 조직과 관리를 위해 서독에서와 유사한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를 구성하면서 동독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방주 단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서독에서와는 달리 동독 전역을 아우르는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를 구성하였다.⁴⁸

그 외 다른 동독의 은행들은 도이치뱅크, 드레스덴은행, 베를린은행, 바이에른주립은행, 독일협동조합은행, 서부독일주립은행(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BfG은행(Bank fuer Gemeinwirtschaft) 등 8개의 일부 신탁청에 의해 관리되다가 서독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 매각절차를 통해 서독의 금융기관들은 동독의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구채무’, 즉 대출금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구채무’ 대출의 가치가 매각대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독의 금융기관들이 동독기업들에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까지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
⁴⁷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문서번호 47).

⁴⁸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문서번호 24).

표 2-2) 서독은행에 의한 동독 금융기관 인수

동독체제 하의 은행	1990년 동독정부의 은행구조개편	서독은행	
독일중앙은행 (Staatsbank)	베를린중앙은행 (Staatsbank Berlin)	신용재건은행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독일신용은행 (Deutsche Kreditbank AG)	도이치뱅크 드레스덴은행	바이에른주립은행
	베를린시립은행 (Berliner Stadtbank AG)	베를린은행 (Berliner Bank)	
독일대외무역은행 (Deutsche Außenhandelsbank)		서부독일주립은행 (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농업식품경제은행 (Bank für Landwirtschaft und Nahrungs güterwirtschaft)	베를린협동조합은행 (Genossenschaftsbank Berlin)	독일협동조합은행 (Deutsche Genossenschaftsbank in Frankfurt a.M.)	
독일상업은행 (Deutsche Handelsbank AG)		BfG은행	
저축금고와 국민은행 (Sparkassen und Volksbanken)			

출처_ 연방감사원 1990년 9월 27일 보고서

그러나 실제로 서독의 금융기관들은 동독의 은행을 인수하면서 그 어떤 위험부담도 갖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상이한 화폐교환율로 인해 발생할 차액은 차액보전기금을 통해 보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독기업의 관리를 맡게 된 신탁관리청이 구채무의 상환도 보장하였을뿐만 아니라 구동독채무보상기금(Erblastentilgungsfond)을 통해 이자도 보장되었다. 서독 금융기관의 원리금은 1995년 한 해에만도 980억 마르크에 달했다. 그중에서 267억 마르크가 이자였다.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원금상환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출해야만 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연방감사원은 1995년의 보고서에서 바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관들은 만일 연방정부가 구채무 대출에 대한 청구권을 직접 인수해서 연방예산을 통해 상환했다라면 납세자들이 수십억 마르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채무에 의한 대출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은행들이 대출금에 시장금리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이자만 절약해도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만일 연방정부가 구채무를 직접 인수하였다면 시장금리를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구채무와 관련된 지출 비용을 더욱 감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감사관들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그 대신에 구채무청산기금을 도입하여 연방예산법에 의해 통제받지 않은 그림자예산을 만들었고 납세자들에게는 구채무청구권과 동독은행 제도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신탁관리청이 부담하게 된 적자를 모두 통일비용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연방감사원은 화폐통합 과정에서 연방은행이 동독의 발권은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정해진 순간부터 동독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구채무 청구권을 전부 동독중앙은행으로 규합했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물론 화폐통합 이전에 이미 동독에 진출해 있던 서독의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였겠지만, 그것이 가능했다면 구채무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채무 청산을 아주 수월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연방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동독은행구조의 재편과정에서 구채무를 시장경제적 은행체제로 전환하면서 최종수요자가 부담할 대출 비용의 폭발적 인상 문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화폐통합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구동독지역의 기업과 지방단체들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실제로 구동독지역을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부채문제를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비용으로 인한 국가예산에 주는 부담도 훨씬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감사원은 연방재무부와 신탁관리청이 동독의 은행을 서독 금융기관에 매각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수십, 수백억 마르크의 세금을 낭비하였다고 비난한다. 연방감사원

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중앙은행의 후속기관을 제외한 동독의 일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독의 금융기관이 지불한 매각대금은 총 9억 마르크였다. 반면에 이들이 인수한 구채무 청구권은 총 430억 마르크에 달했다. 1990년 당시에는 시장이자율이 10%를 넘을 때였다. 결국 구채무 청구권을 통해서 받는 연간 이자만 해도 매각대금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연방감사원은 지적하였다. 나아가 서독의 도이치뱅크와 드레스덴은행이 독일신용은행과 합작회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위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방감사원은 보고하였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에는 서독의 금융기관에 의한 동독은행의 인수와 관련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그 몇 가지 매각사례를 정리해 보자.

베를린시립은행(Berliner Stadtbank AG)은 베를린은행(Berliner Bank AG)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베를린은행은 4,900만 마르크를 매각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를린은행은 베를린시립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115억 마르크의 구채무 청구권도 함께 인수하였다. 베를린은행은 인수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1억 1,100만 마르크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미리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기관이 베를린시립은행의 매각협상에 참가하는 것 자체를 막아 놓았다. 연방감사원은 이렇게 손해배상규정을 도입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 자체를 비판하였다.

베를린협동조합은행(Genossenschaftsbank Berlin-GBB)은 동독 농업식품경제은행의 후신으로 1990년 4월에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일협동조합은행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때 독일협동조합은행은 매각대금 1억 2,000만 마르크를 지불하고 구채무 청구권 175억 마르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연방감사원은 이 매각대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독일협동조합은행이 베를린협동조합은행을 인수하면서 구채무 청구권까지 함께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구채무 청구권



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각대금의 몇 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구채무 청구권의 인수가 매각대금에 반영되었어야만 했다”고 비판하였다. 인수자가 이 방식으로 어떤 위험부담도 갖지 않은 채 채무에 대한 청구권을 넘겨받았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도 얻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사항이 동독은행의 인수과정에서는 간과된 것이다.

독일대외무역은행(Deutsche Außenhandelsbank AG-DABA)은 1990년 5월에 서독의 서부독일주립은행(Westdeutschen Landesbank Girozentrale)과 합작으로 ‘독일산업상업은행’(Deutsche Industrie und Handelsbank)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91년 1월 9일에 연방재무부와 독일대외무역은행 그리고 서부독일주립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부독일주립은행이 ‘구채무’를 처리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업무협약에는 서부독일주립은행에게 1993년에 독일대외무역은행 주식을 인수하는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부독일주립은행은 1994년에 4억 3,000만 마르크의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독일대외무역은행을 인수하였다. 그와 동시에 70억 마르크의 구채무 청구권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독일상업은행(Deutsche Handelsbank)은 여러 단계를 거쳐 매각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은행의 지분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동독중앙은행이 이 은행의 지분을 64% 보유하고, 30%는 5개의 국영기업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6%는 독일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었다. 5개의 국영기업이 1990년에 신탁관리청의 관리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지분도 신탁관리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중 독일중앙은행의 지분이 가장 먼저 BfG은행에 매각되었다. 이를 위해 BfG은행은 2억 2,500만 2,800 DM의 매각대금을 지불하였다. 그 대신에 65억의 구채무 대출금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그리고 신탁관리청과 독일보험공단의 지분도 BfG은행에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불된 매각금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 AG)은 1990년 6월 26일에 서독의 드레스덴은행과 그리고 1990년 7월 2일에는 서독의 도이치뱅크와 각각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은 합작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구채무 청구권을 관리하게 하고, 드레스덴신용은행회사(Dresdner Bank Kreditbank AG)에 360억 마르크 그리고 도이치뱅크신용은행회사(Deutsche Bank Kreditbank AG)에 890억 마르크의 구채무 청구권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그리고 관리비용으로 도이치뱅크에 2억 9,700만 마르크, 드레스덴은행에 1억 2,500만 마르크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연방감사원은 이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은 1991년 11월에 협력계약을 해지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합작회사의 주식은 1991년 3월에 드레스덴은행에 3억 1,000만 마르크 그리고 1990년 12월에 도이치뱅크에 1억 1,300만 마르크에 매각되었다. 그러나 독일신용은행은 구채무 청구권의 관리비용으로 이들 은행에 지불한 수수료로 이미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드레스덴은행과 도이치뱅크는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연방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드레스덴은행과 도이치뱅크는 독일신용은행과 인수협상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수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연방재무부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한다.

연방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특히 서독의 금융기관들이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구채무 청구권을 인수했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구채무의 청산은 연방정부에 의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독의 은행들은 구채무상환기금(Erblastentilgungsfond)을 통해 이자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구채무 청산권이 차액보장의 형태로 전환



된 후에 신탁관리청과 채무청산기금을 통해서 이중으로 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동일한 청구권에 대해서 세 번씩 이자를 지급받는 기관도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신탁관리청을 통해 구채무 청구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마르크가 이중으로 지불되었다고 연방감사원은 지적하였다.⁴⁹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은행의 내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밀문서로 처리되었지만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되었고 슈피겔지가 그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문서 자체는 기밀이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방의회의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연방의회의 사민당에서 제출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연방재무부는 동독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야만 했다. 사민당 질의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붕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전체 납세자에게 막중한 부담을 전가한 서독 금융기관에 의한 동독은행의 인수과정의 문제를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⁵⁰

이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1990년 당시 연방정부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화폐통합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동독지역에 신속하게 서독의 마르크를 도입하여 동독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동독주민 중에서 서독 마르크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 전

⁴⁹ 서독의 은행들이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채무청산기금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 묻는 사민당 오토 쉴리 의원의 질문에 유르겐 슈타르크 연방재무차관은 총 120억 마르크라고 답하였다. 연방의회 속기록 Deutscher Bundestag, 13. Wahlperiode, Stenographisches Protokoll der 73.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29.11.1995, p.6396.

⁵⁰ 동독의 구채무-연방의회 질의와 응답(문서번호 70).

혀 다른 조건에서 형성된 동독의 구채무가 실질적인 부채로 전환되는 과정에 분명히 일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서독의 연방정부는 가능하면 서독의 금융기관이 화폐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구채무 청구권이라는 선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재무부차관 유르겐 슈타르크의 답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연방의회에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에서 슈타르크 차관은 통일 이전에 이미 서독 금융기관과 동독은행 간에 협상이 있었고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 협상에 연방정부, 서독은행 그리고 동독 지도부의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1990년 7월 1일에 있을 화폐통합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동독의 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독은행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사민당의원 페터 콘라디의 질문에 그는 7월 1일에 제대로 작동하는 은행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독은행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하였다. 그는 서독의 은행들이 신 연방지역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연방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면 슈타르크 차관의 답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독의 금융기관들은 헐값에 인수한 동독은행들의 건물에 자신의 지점을 개설하였다. 그것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억지였다. 더욱이 그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았다. 슈타르크 차관의 답변을 들은 사민당의 프리트헬름 울리우스 보이허 의원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차관님, 그러면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의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 동독은행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약정신에 입각한 예산정책의 기본원칙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⁵¹

.....

⁵¹ Deutscher Bundestag, 13. Wahlperiode, Stenographisches Protokoll der 73.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S.6394.

화폐통합 분석이 주는 시사점

동독과 서독이 형식적으로 통일되기 이전에 화폐통합이 진행되면서 큰 사고 없이 화폐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독일의 화폐통합이 적어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위대한 성공작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것은 신속하게 치밀한 로지스틱의 성과였고, 통일과정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된 인민군 해체와 연방군으로의 통합과정에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통합은 단순한 화폐교환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욱이 화폐교환이 실질적으로 은행구조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지 현금과 현금을 바꾸는 교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양의 현금수송차량이 동독 전역으로 돈을 운반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 과정에서 화폐통합에 관한 대부분의 분석들이 화폐교환율의 결정과 그것이 준 경제적 영향에 관해 포커스가 집중되었었다. 정책문서를 통해 본 화폐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연방정부와 서독은행들 간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1995년 연방감사원의 분석을 소개한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연방정부, 특히 수상청의 반응이다. 구동독 재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총괄하였던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2013년의 인터뷰

에서 서독의 기업들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앞에 두고도 자기 회사의 이윤만 챙기느라 동독지역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했었다. 그런데 화폐통합 과정에서 서독의 은행들이 보여준 것은 투자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마치 일확천금을 노리는 천박한 자본가들과 같은 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테비히는 2015년에 발표한 자서전에서는 서독의 은행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 비난한 것만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통합 과정에서 서독의 은행들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통일비용을 지불하는 공공재정이 더욱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귄터 펠이 1992년에 분석한 것처럼 경제 및 화폐통합으로 인해 서독에서는 생산성, 실질임금, 총생산 그리고 투자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동시에 실업률은 1982년 이래 최저로 떨어져서 실업자의 수가 2백만 명 이하로 내려갔다. 한편 동독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져서 생산량과 근로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제품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들이 판로를 찾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생산공장이 줄지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었다.⁵²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독일통일 총서 중 신탁청편에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사실은 화폐통합으로 인해 동독 경제체제 하에서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던 부채는 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고 그것 또한 동독경제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폐통합 과정에서 화폐교환율 또는 화폐통합의 시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를 보면 그 어느 쪽도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조기 화폐통합을 주장하는 의견도 그리고 단계적 통합을 주장한 의견도 모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

.....

⁵² 독일경제 1990-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문서번호 52).



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환비율의 경우에도 1:1로 하거나 1:4로 하거나 모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통합과 같이 경제·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영역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정치적인 결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가 1990년 7월 1일에 화폐통합을 실현하고자 한 배경에 선거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서독은행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 문제는 통일비용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난 경로의존성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방의회 총선거를 염두에 두어야만 했던 콜 수상이 화폐통합 과정에서 서독은행들의 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연방감사원이 1995년에 제시했던 대안, 즉 동독의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던 채무 청구권을 동독중앙은행으로 모아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후에는 연방정부, 즉 국가가 모든 채무를 상환했다더라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이념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주도적인 이념으로 작동하던 1990년대 초 독일에서는 연방감사원이 제안한 것이 대안이 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경우 정치적인 이념과 관계없이 연방감사원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통일과정에서 국가적인 과제를 전체의 과제로 모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표 2-3) 동서독 화폐통합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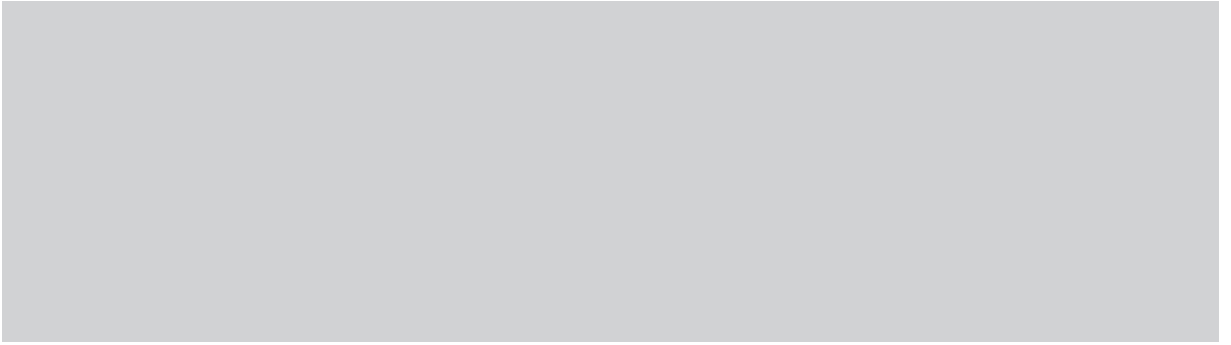
1989년 11월 9일	동독 여행자유화 발표와 동시에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11월 13일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 내각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내각 구성 위임
1989년 11월 17일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동서독의 계약 공동체 성립의향을 표명하는 정 부성명서 발표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 수상이 연방의회에서 동독의 변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로운 유럽공동체의 틀 내에서 독일인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통일을 실현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는 ‘10개 조항 프로그램’ 발표
1989년 12월 17일	동독 정부사절단이 연방재무부에 최초로 자금지원을 의뢰
1990년 1월 초	사민당 재무정책 대변인 잉그리트 마테우스-마이어, 1989년 12월 15일 에 오토 에브네트가 사민당 내부회의에서 제시한 신속한 화폐 및 경제통 합 계획을 바탕으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5:1로 교환 제안
1990년 1월 15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은 즉각적인 화폐통합에 반대하며 ‘동독경제 의 회생을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통화개혁은 동독의 혼돈만 불러일 으키므로 우선 동서독 공동통화지역을 먼저 구축한 다음 단일통화의 도입 필요, 이를 위해서는 동독의 물가보조금 폐지와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함
1990년 1월 19일	잉그리트 마테우스 마이어 사민당 의원 ‘디 짜이트지’에 화폐통합 이외에 동독국민들의 이주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글 기고
1990년 1월 19일	바이겔 장관 ‘인위적으로 접목’된 동독과의 화폐통합은 ‘위험하고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간주, 조속한 화폐통합 반대-‘우리의 통화가 약해지면 동 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유럽의 화폐통합을 위해서도 이롭지 못할 것’
1990년 1월 24일	동독의 모드로우 정부 자체개혁방안 제시. 동서독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 는 가운데 1992년까지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교환 가능하도록 하 며, 가격자율화의 단계적 실시 제안
1990년 1월 24일	한스 디트마이어 차기 연방은행장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성급한 양독 화폐 통합 경고 “문제는 동독 자체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가려는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태환화폐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유동적인 환율가를 조성할 수 있느냐이다. 바로 이러한 전제조 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1월 26일	연방재무부차관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는 담당 서기였던 티로 자라친 (Thilo Sarrazin)에게 경제 및 화폐통합의 콘셉트를 구상할 것을 지시했다.
1990년 1월 30일	장관, 차관 및 국장급이 참석한 연방재무부 비공개 회의
1990년 1월 30일	연방재무부에서 동독 경제통합 및 화폐통합의 제안에 대한 주도적 역할 담당
1990년 2월 2일	헬무트 콜(Helmut Kohl, CDU) 서독 총리와 모드로우(Modrow) 동독 총리 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회담했다. 모드로우 총리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올해 중반까지만 버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콜 총리는 100-150억 동독 마르크를 지원해달라는 모드로우 총리의 요청을 거절
1990년 2월 5일	콜 수상과 바이겔 재무장관 동독정부에 경제 및 화폐공동체 성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로 결정
1990년 2월 6일	콜 수상 화폐공동체의 성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동독정부에 전달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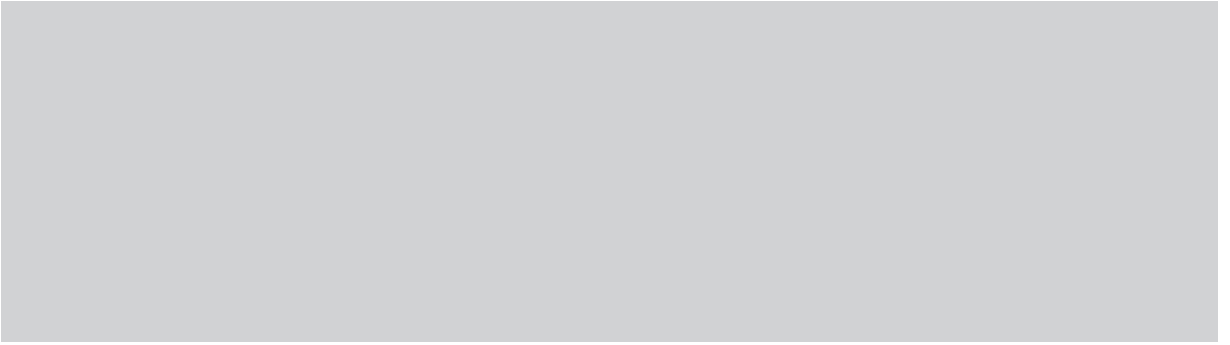
1990년 2월 7일	연방정부에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의 발족을 결정. 연방재무부에 화폐통합 분야의 의사결정권을 위임
1990년 2월 7일	연방재무부에서 통일 관련 지출을 위해 69억 독일 마르크(DM)의 추가 예산을 산정
1990년 2월 7일	독일연방은행 총재 칼 오토 뢰hl(Karl Pöhl)은 1:4 교환비율의 화폐통합을 제안
1990년 2월 8일	콜 총리와 테오 바이겔(Theo Waigel) 연방재무부장관은 자라친과 쾰러 차관이 제시한 사유재산의 경우 1:1, 그리고 나머지 재산의 경우 1:2 교환 비율 선호 의사표시
1990년 2월 9일	아직 분단된 동독과 서독의 공동 경제 및 화폐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제안서를 동독정부에 전달
1990년 2월 9일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조사·평가하는 경제 5현, 즉 경제전문자문위원회에서 수상에게 조속한 화폐통합의 도입에 대한 이의를 제기
1990년 2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의 회담에서 소련이 독일통일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 전달
1990년 2월 11일	연초부터 총 74,421명의 이주민이 발생. 매일 약 2,000명이 추가
1990년 2월 13일	동독 총리 150억 독일 마르크(DM)의 긴급 원조를 요청
1990년 2월 15일	연방재무부 지도하에 동독의 현재 경제상황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잠재적인 통일비용을 책정하기 위한 작업 기초로 신뢰할 수 있는 동독 재정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
1990년 2월 15일	콜 수상은 경제 및 화폐통합을 정부 성명을 통해 발표
1990년 3월 9일	연방재무부의 참여 하에 ‘2+4’ 대화가 도입
1990년 3월 13일	콜 수상과 모드라우 총리에 의해 발족된 장관급 전문위원회에서 서독과 동독의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
1990년 3월 13일	연방재무부에서 소련군 철수를 위한 자금조달 비용을 산출하라는 지시
1990년 3월 14일	연방재무부 산하 전문가 그룹에서 최초의 ‘사회통합에 근거한 화폐통합 및 경제 공동체’ 도입에 관한 중간보고를 통과
1990년 3월 26일	독일연방은행 티트마이어(Tietmeyer) 총재는 총리로부터 화폐통합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음
1990년 3월 27일	블룸(Blüm) 노동부장관은 전문위원회와 연방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 교환비율을 촉구
1990년 3월 28일	콜 수상은 연방재무부 실무팀에 화폐통합 실천을 위한 초안을 5월 6일 지방선거 때까지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1990년 3월 29일	1945-1949년 사이의 사유재산 문제에 관한 규명은 독일통일 달성을 위한 협상에서 일단 제외되었다.
1990년 3월 30일	중앙은행위원회는 2:1 교환비율에 찬성했다.
1990년 3월 30일	3월 18일 인민의회선거 후 기민당(CDU)과 사민당(SPD) 정당 간의 연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1990년 4월 7일	콜 총리는 1990년 7월 1일까지 독일 마르크의 도입을 약속했다. 교환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990년 4월 10일	새로 선출된 동독 최고인민회에서 정부를 구성하게 될 정당들이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동독의 연방가입이라는 공동목표로 ‘독일을 위한 연맹’ 연정협정 체결

1990년 4월 12일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가 이끄는 ‘독일을 위한 연맹’이 1:1 교환비율을 요구했다.
1990년 4월 14일	연방은행은 동독정부의 1:1 교환비율의 도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제안
1990년 4월 30일	콜 수상의 압력에 의해 전반적으로 1:1의 교환비율에 합의했다.
1990년 5월 15일	연방내각에서 1990년 연 내에 전독일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 연방내무부에서 연방재무부의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지도권을 위임받는다. 연방내독부는 배제
1990년 5월16일	1,150억 서독 마르크(DM)의 독일통일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1990년 7월 1일	경제화폐사회공동체조약 발효
1990년 7월 6일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내무부장관의 지도하에 통일조약을 위한 최초 협상이 진행되었다.
1990년 8월 22일	동독 국민회의 집회가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한 동독의 연방가입에 관한 의사일정으로 소집되었다. 8월 23일 새벽 2시 47분에 363명의 참석 의원들이 294개 찬성표로 동독의 연방가입을 결의했다. 반대 62표, 기권 7표, 불참 37표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화폐개혁 이후 가격과 경제정책의 기본지침에 관한 법	1948년 6월 24일	통합경제영역 경제위원회 위원장 쾰러(초대 서독 연방회의장)	Gesetz- u. Verordnungsblatt des Wirtschaftsrates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 1948, Nr. 12, S. 59 f.
2	서독과 동독 간의 통상협정(베를린협정)	1951년 9월 26일	독일은행, 동독정부 내무고역 무역과 물자조달성	Bundesanzeiger, 1951, Nr. 186, S. 3 ff
3	내무고역의 신용한도	1975년 2월 20일	연방정부 내무성 바이히트 국장	Bundesarchiv B 288/426
4	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	1989년 11월 6일	Dr. Wilms, 연방내무관계부 장관(BMB) Dr. Priesnitz, 연방내무관계부 대표(BMB) Dr. Sudhoff, 외무부 대표(AA) Dr. von Würzen, 연방경제부 대표(BMWf) Dr. Knittel, 연방교통부 대표(BMV) Dr. Florian, 연방우정부 대표(BMP) Dr. Bertele, 상인대표국 대표(Stäv) Dr. Duisberg(고위 당직자)	독일연방 공문서관, B 136/201 69,221 - 14223 Sta 8 Bd. 3. - 뒤스부르크 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1월 6일, 복사본: St Bende, GL 22. (BArch, B 136/201 69,221-14223 Sta 8 Bd. 3. -Vorlage des MDg Duisber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Rudolf Seiters,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5	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책임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공동체’	1989년 11월 17일	동독 각료회의(Ministerrat) 의장 한스 모드로우 (Hans Modrow)	1989년 11월 18/19일자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지
6	10-개항-프로그램-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 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 총리 (Bundeskanzler)	한스 위르겐 쿤스투스(Hans Jürgen Küsters), 1998, 독일통 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 일 발체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Nr. 122A(Anlage) 643-64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	루데비히(Ludewig) 교장이 자이티스(Seiters) 연방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2월 13일	연방수상청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체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S. 643 f.
8	동독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동독중앙은행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5-276, Ausgabetaag 29.12.1989
9	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7, Ausgabetaag 29.12.1989
10	동독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물가관리부	DDR-Gesetzblatt 1989 I/26, 276
11	DM 개시 대차대조표(DM-Eröffnungsbilanz)의 소유지(토지)에 관한 임시 평가 방침	1990년	연방재무부	연방재무부, 1990년(BMF, 1990)
12	동독의 화폐와 경제문제에 관한 전문가 초청 연방정부 간담회	1990년 1월 9일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자이티스, 경제부차관 폰 뉘어젠, 재무차관 쾰러, 노동사회부차관 테트 마이어,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뉘이스부르크 국 장, 연방은행 부총재 솔레징거, 드레스덴은행 이사회 대변인 쾰러, 전국상공회의소 대표 기제커 외 다수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13	10개항 프로그램	1990년 1월 12일	틸로 자라친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 지, p.174-183
14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협약- 동독정부 초안	1990년 1월 17일	동독정부, 서독정부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체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45A, S. 713-71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5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서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39, S. 695.
16	모드로우의 계획-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	1990년 2월 1일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우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동독 외무부 홍보처 발간)
17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	1990년 2월 7일	연방수상청/ 연방내무부 독일통일 실무그룹	연방수상청/연방내무부의 독일통일 정책그룹 (Bundeskanzleramt/ Arbeitsgruppe zur Deutschen Einheit des Bundesinnenministeriums)
18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	1990년 2월 9일	연방정부 재무차관 쾰러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35014 Ge 33 Band 1
19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	1990년 2월 14일	서독의 경제발전 평가를 위한 경제전문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위원장 한스 슈나이더, 연방수상 헬무트 콜	Deutscher Bundestag, 11/8472, S. 306-308
20	화폐통합 대신 동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 기적 전략-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1990년 2월 17일	브레멘대학 교수 루돌프 히켈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21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	1990년 3월 6일	연방수상청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2	동독중앙은행 개정법	1990년 3월 6일	동독 국가평의회	DDR-Gesetzblatt 1990 I/16, 125
23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	1990년 3월 9일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동독의 재무장관 발터 지거트, 연방감사원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an die Obersten Bundesbehörden, II A 3 - H 1360/8 - 1/90
24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	1990년 3월 20일	Präsident der Staatsbank der DDR Horst Kaminsky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NN, S. 233-236, Ausgabebeg 25.04.1990
25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의 시각	1990년 3월 21일	연방정부 경제부장관, 수상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26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림 장관의 서한-화폐교환 비율의 사회적 의미	1990년 3월 27일	연방 노동복지부장관 노베르트 블림(Nobert Blüm), 헬무트 콜 연방 총리	한스 위르겐 퀴스투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취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231, S. 979-980.
27	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의 결정	1990년 4월 3일	연방수상실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28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관계	1990년 4월 20일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 수상청 루데비히 구장, 소련 부총리 시타얀, 소련 외무차관 오브 민스키, 키브친스키 소련대사	Bundesarchiv, BArch/BKAmt/212 - 35400 De 39 NA 2 Band 3
29	경제회폐사회통합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	1990년 4월 27일	서베를린 시정부 시장실 슈뢰더, 수상청장 자이터스	Archiv Bundess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0	동서독 정부가 작성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의 실무문서에 관한 소련의 입장표명-동독정부에게 제시	1990년 4월 28일	소련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31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	1990년 5월 18일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 연방은행감독청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연방보험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상호경제원조평의회(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유럽연맹 (Europäische Gemeinschaft)	연방법률관보, 1990 II 537쪽, 제9항, 1998년 6월 9일에 제정된 법 (BGBl. I S. 1242) (BGBl. 1990 II S.537, Art 9 3 Gesetz vom 09.06.1998 (BGBl. I S. 1242))
32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표명과 제안	1990년 5월 23일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Vorsitzende Bergmann-Pohl, Ausschuss Deutsche Einheit der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 der DDR, Drucksache 24 a
33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4차 회의부록: 동독기업의 수익성, 도이치마르크로 전환 시 기업의 재정상황과 재산의 가치 평가를 위한 DM 개시 대처대조표)	1990년 5월 25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보기쉬, 신탁청 이사회 임원, 크리우제 창장, 최고인민회의 각 당 대표, 동독경제부 대표, 서독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비서국 대표	Bundesarchiv, Barch/DA 1/17490
34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금 회담	1990년 5월 28일	연방수상청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결과 프로토콜 날짜 없음 (Bundesarchiv: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Undatiertes Ergebnisprotokoll)
35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입장	1990년 6월 16일	동독 외무성, 동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폴란드 외무장관 스퀴비츠프스키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6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테오 바이켈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크 동독 재무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7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38	소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조치	1990년 6월 27일	연방재무부	Bundesarchiv, BArch/BK, 01 (212)-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39	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연방은행, 동독 내각 각료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9, S. 515-524, Ausgabebetrag 09.07.1990
40	대외무역과 자본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Ministera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Gesetzblatt der DDR, 41/60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1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동독 재무부, 동독 중앙은행,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1-502, Ausgabebetag 04.07.1990
42	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Volkskammer der DDR, Präsidium der Volkskammer der DDR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3, Ausgabebetag 04.07.1990
43	베를린 국립은행법	1990년 6월 29일	동독인민회의	DDR-Gesetzblatt 38, 504
44	서방국기와 서독의 피트니와 체결한 계약의 채무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4일	동독 내각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2, S. 662-664, Ausgabebetag 20.07.1990
45	독일통일 실현 조약(동일 조약)에 관한 제1차 협상	1990년 7월 6일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Günther Krause) 정부차관(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 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 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무부, 노동사회 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장부 시장실(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바이에른(Bayern)주, 함부르크(Hamburg)시, 바덴-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베를린(Berlin)시, 유럽 공동체위원회(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6	독일통일 실험 조약(통일조약) 관련 합의된 합상 주제 목록	1990년 7월 9일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권터 크라우제 정무차 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장관, 동독 장 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 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더스 연방 총리실 비서 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 부, 내국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 에른주, 함부르크시, 바덴-뷔템베르크주, 니더작 센주, 베를린시), 유럽공동체위원회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 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체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 1331.
47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	1990년 7월 26일	동독 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5-1279, Ausgabetag 30.08.1990
48	어음에 대한 이종과세 제한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31일	동독 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9, Ausgabetag 30.08.1990
49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 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평권을 연방금융감독 원에 위임하는 규정	1990년 9월 4일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켈, 신용기금 연방관리청, 독일연방은행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47, S. 1995, Ausgabetag 15.09.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0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산에 관한 법 (DM-대처대조법)	1990년 9월 23일	신탁청, 연방법무부, 연방재무부, 연방경제기술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69-1193, Ausgabetag 28.09.1990 (Gesetz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gesetz]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51	화폐통합 과정에서 화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	1990년 10월 29일	연방신용관리국, 독일연방은행,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켈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59, S. 2394-2397, Ausgabetag 03.11.1990
52	독일경제 1990-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	1991년 1월 1일	Günter Pehl(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Deutsche Bundesbank, Bundeskabinett, Regierung der DDR, Vorsitzender des Ministerrats der DDR Hans Modrow, Ministerpräsident der DDR Lothar de Maizière, Bundeskanzler Helmut Kohl, F.D.P.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Jahrgang 52, 1991, Heft 1, S. 26-37, http://library.fes.de/gmh/main/pdf-files/gmh/1991/1991-01-a-026.pdf
53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도입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	1991년 1월 2일	연방회의,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켈	Bundesrat, Drucksache 3/91
54	마르크 도입과 관련한 대처대조법의 개정 발표	1991년 4월 18일	연방법무부장관 클라우스 킹켈, 신탁청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71-993, Ausgabetag 26.04.199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5	재산법 개정안	1991년 4월 18일	연방법무부장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경제장관 헬무트 하우스만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57-970, Ausgabebtag 26.04.1991
56	동독기업의 인수-도이치뱅크가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한 사례	1991년 4월 30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Deutscher Bundestag, Fraktion der SPD i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AG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53
57	베를린은행에 의한 베를린국민은행의 인수	1992년 1월 6일	Berliner Bank, Berliner Stadtbank	Der Spiegel, 2/1992, http://magazin.spiegel.de/EpubDelivery/spiegel/pdf/13679257
58	헤센-튀링겐 공동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3월 10일	Land Hess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Hans Eichel; Freistaat Thüring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Bernhard Vogel	HessGVBl. I S. 190, ThürGVBl.S. 291
59	1991년도 연방은행 사업보고서	1992년 4월 2일	Bundesregierung, Bundesländer, Deutsche Bundesbank	Geschäftsbericht der Deutschen Bundesbank für das Jahr 1991, Selbstverlag der Deutschen Bundesbank, Frankfurt am Main https://www.osv-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OSV_Staatsvertrag_Lesefassung-26-05-09.pdf
60	동부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12월 17일	Land Brandenburg, Land Mecklenburg-Vorpommern, Freistaat Sachsen, Land Sachsen-Anhalt	
61	서독을 방문한 동독주민에게 제공된 환영금의 재원과 총액	1993년 3월 9일	연방의회, 연방내무부차관 비펜슈미트, 연방의회 의원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45, S. 11
62	사회시설의 구매에 대한 질의와 답변	1993년 6월 3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PDS/Linke Liste)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507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3	구동독채무상환기금법 개정법	1993년 6월 23일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30, S. 984-986, Ausgabebetag 26.06.1993 (Artikel 37 des Gesetzes über 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finanziellen Erblast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zur langfristigen Sicherung des Aufbaus in den neuen Ländern, zur Neuordnung des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s und zur Entlast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 / Gesetz zur Umsetzung des Föderalen Konsolidierungsprogramms)
64	동서독 화폐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규정	1993년 8월 24일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kanzler Helmut Kohl,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47, S. 1522-1524, Ausgabebetag 04.09.1993
65	화폐 전환 이후 독일의 화폐와 통화	1994년	라인하르트 폴 Bundesregierung, Treuhandanstalt, Bankenverbände,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in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Irmgard Karwatzki(CDU),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Christa Luft(PDS)	독일 연방은행, DIW 베를린
66	은행에 의한 신탁청 관리기업의 인수	1995년 1월 20일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7	바이에른 주은행에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의 매각	1995년 3월 28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PDS)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933
68	협동조합의 매각	1995년 10월 13일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rt Falthä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Gerald Thalheim(SPD)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45
69	신연방주의 구채무 청산에 관한 연방감사원의 입장에 관하여	1995년 11월 10일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rt Falthä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Wieland Sorge(SPD); Bundesrechnungshof; Deutscher Bundestag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980
70	동독의 구채무-연방의회 질의와 응답	1995년 11월 29일	Deutscher Bundestag;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Jürgen Stark; Abgeordnete des Deutschen Bundestages; Bundesrechnungshof;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Deutscher Bundestag-13, Wahlperiode, 73. Sitzung, Bonn, 29.11.1995
71	통일의 경제적 비용	1996년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동독, 신탁관리청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년, German Unification-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p.189-200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71)

문서
번호 1

화폐개혁 이후 가격과 경제정책의 기본지침에 관한 법
1948년 6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통합경제영역 경제위원회 위원장 쾰러(초대 서독 연방의회의장)

내용_

이 문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 독일에서 미국점령지역과 영국점령지역에 설치된 공동경제위원회가 1948년에 도입한 기본지침법이다. 이 법의 도입을 통해 미국과 영국은 이후 서독에서 자유시장경제를 구축할 기본틀을 만들었다. 이 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제위원회의 행정책임자는 루드비히 에어하르트였다. 에어하르트는 나중에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부장관 그리고 수상을 역임한 사람이다. 1948년에 도입된 법은 1년 간 유효하였고 1949년에 새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새 법 또한 1년 간 유효하였다. 이 법을 통해 대부분의 물자에 대한 가격규제가 해제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 스스로 가격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고 전후 독일에서 여러 가지 물자가 유통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주식과 주요 자원은 가격규제 해제에서 제외되었다. 독점과 같은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었다.

출처_ Gesetz- u. Verordnungsblatt des Wirtschaftsrates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 1948, Nr. 12, S. 59 f.



문서
번호 2

서독과 동독 간의 통상협정(베를린협정) 1951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은행, 동독정부 내독교역 무역과 물자조달성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협정으로 불리는 동독과 서독 간의 물자교류에 관한 협약문이다. 이 협정을 통해 서방연합군이 점령했던 지역과 소련군이 점령했던 지역에 건입된 서독과 동독 간의 교역이 시간적 제한없이 허용되었다.

그 당시 서독과 동독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의 문안은 독일연방주의 은행이 발행하는 도이치마르크가 사용되는 지역과 독일조폐은행이 발행하는 도이치마르크가 통용되는 지역으로 명칭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서로 교역할 물자, 서비스와 그 가치와 그것을 정산하는 단위(서독과 동독의 화폐를 1:1의 비율로 교환), 그리고 정산하는 방법(각 지역의 은행에 설치된 계좌에 지불) 등이 규정되었다. 이 계좌는 이자가 지불되지 않았고 서로 합의된 규모 내에서 적자를 내는 것도 허용되었다(신용한도, 독일통일 총서 문서번호 3 참조). 1951년 베를린협정이 체결될 당시 적자 허용한도는 삼천만 마르크였다. 서독이 동독으로 수출한 물자는 주로 철강제품과 기계, 비료 그리고 생선이었고 동독은 주로 설탕과 사료와 같은 농산품, 석탄과 정유제품을 수출하였다.

출처_ Bundesanzeiger, 1951, Nr. 186, S. 3 ff

문서
번호 3

내독교역의 신용한도
1975년 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독성, 바이히트 국장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내독성의 바이히트 국장이 연방수상에게 보낸 것으로 내독교역과 관련하여 신용한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독교역에서 대금이 미지불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 1949년에 이미 무이자로 신용대출할 수 있는 신용한도 규정들이 도입하였다. 이 규정이 1951년에 베를린협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문서번호 2 참조). 1951년에 신용한도는 3,000만 마르크였다. 이 신용한도는 실질적으로 동독만 이용하였다. 그리고 신용한도의 규모 또한 동독의 요청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내독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서독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독은 신용한도의 확대 요청을 항상 받아주었다. 1974년 12월 6일에는 신용한도를 1981년 12월 31일까지 8억 5,000만 마르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독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1960년에 도입된 부채 정산조항은 한번만 적용되었다. 그 결과 동독은 신용한도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이자 장기융자처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동독은 증액된 신용한도를 대부분 사용하였다. 1949년에 동독이 사용한 신용한도액이 1,600만 마르크였지만 1958년에 이미 1억 5,000만 마르크, 1975년에는 7억 9,000만 마르크에 달했다.

출처_ Bundesarchiv B 288/426

문서
번호 4

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
1989년 11월 6일

담당자 / 기관

- Dr. Wilms, 연방내독관계부 장관(BMB)
- Dr. Priesnitz, 연방내독관계부 대표(BMB)
- Dr. Sudhoff, 외무부 대표(AA)
- Dr. von Würzen, 연방경제부 대표(BMWi)
- Dr. Knittel, 연방교통부 대표(BMV)
- Dr. Florian, 연방우정부 대표(BMP)
- Dr. Bertele, 상임대표국 대표(Stäv)
- Dr. Duisberg (고위 당직자)

내용

이 문서는 1989년 11월 6일 18시에 열린 독일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차관보 회의에 관한 기록이다. 논의된 문제는 동독정부로부터 서독정부에 전달된 경제개혁계획이었다. 동독정부는 경제부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지만 정치체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사회주의 통합당의 독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서독에 전달하였다. 서독에게는 동독의 경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치체제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차관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서독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동독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이 동독의 정치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였다. 서독이 동독에 제공할 재정지원은 특히 인프라 구축과 환경개선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 136/201 69,221-14223 Sta 8 Bd. 3. -뉘스부르크 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1월 6일. 복사본: St Bende, GL 22.

(BAreh, B 136/201 69,221-14223 Sta 8 Bd. 3. -Vorlage des MDg Duisber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Rudolf Seiters,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담당자 / 기관_ 동독 각료회의(Ministerrat) 의장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내용_

1989년 11월 13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 내각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고인민 회의에 의해 동독의 정부를 구성할 것을 위임 받았다. 동독의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한 모드로우는 정당들에게-독일사회주의통일당(이하 SED), 독일기독교민주당(이하 CDU), 독일민주노동당(이하 DBD), 독일자유민주당(이하 LDPD), 독일국민민주당(이하 NDPD)-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치 연합을 토대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스 모드로우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이 정부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회주의체제는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를 위해 경제적 성과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동독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동독경제에 안정과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개혁이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개혁은 다양한 분야, 사실 동독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개혁; 경제적 주체 개개인의 자기 책임과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제 개혁; 교육 개혁; 지금까지보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새로운 에너지 계획; 국가 서비스와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행정 개혁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동독의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동독은 개혁 이후에도 바르샤바조약의 의무를 준수하며 유럽안보보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비사회주의 경제권과는 상호 이익에 기초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이 구성된 정부는 서독과의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평화유지, 군비축소, 경제, 과학기술, 환경보호, 교통, 우편, 통신, 문화, 관광 및 포괄적인 인도적 분야 등 사회, 정치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새로운 정부는 유엔과 그 산하 조직과의 건설적인 협력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출처_ 1989년 11월 18/19일자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지



문서
번호 6

10-개항-프로그램-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 총리(Bundeskanzler)

내용_

1. 서독은 동독의 과도기에 외환기금(Devisenfonds)에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동독 쪽에서 동독을 여행하는 서독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동독여행 규정을 간소화하며 외환기금에 일정한 정도까지 자체적인 기여를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2. 환경, 인프라, 통신 분야를 비롯한 동서독의 협력 지속 및 집중화
3. 서독은 동독의 정치, 경제적 변화라는 객관적인 전제 하에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4. 모드로우 총리가 발의한 계약공동체에 관한 제도 확립 확대
5. 서독은 동독 자유선거 이후 연방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6. 지속적이고 공정한 유럽의 평화 질서를 고려해 내독관계를 전 유럽적 프로세스에 포함시킨다.
7. 서독의 연방정부는 동독경제가 유럽 공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무역협력조약의 체결을 지지한다. 독일통일은 유럽 통합의 맥락 속에서 고려될 것이다. 유럽 공동체는 민주주의적 동독과 기타 중-, 남동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 개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8.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하나의 유럽 건설을 위한 구심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9. 군축과 군비 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0. 통일은 연방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이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Hans Jürgen Küsters).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Nr. 122A(Anlage) 643-644.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수상청 경제국장이었던 요하네스 루데비히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1989년 12월 12일에 열린 차관회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한 보고이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이후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예측하였다.

- 연방재무부의 대략적 산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동독의 재정지원 조치에 투입될 예산은 38억 도이치마르크에 달한다. 이 중 1990년에 투입될 예산은 17억 7,700만 마르크이다.
- 그 밖에 다음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독 무역 공급을 위한 보증금을 현 45억 도이치마르크에서 15억 도이치마르크를 늘린 60억 도이치마르크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위해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me)(ERP)과 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KfW)의 신용 기금 20억 도이치마르크를 연방예산을 통해 추가로 늘린다; 동독에 대한 재정 신용 보증금 10~20억 도이치마르크를 인수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 헬무트 하우스만(Helmut Haussmann) 연방경제부 장관은 상기 재정 지원 조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동독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 최종 결정은 1989년 12월 15일 차관급 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S. 643 f.



문서
번호 8

동독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동독중앙은행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끌던 동독 개혁정부의 재무장관이 동독주민의 사적 외국여행을 위해 필요한 외환에 관해 내린 조치이다. 이 조치는 동독에 거주하는 동독주민뿐만 아니라 업무상 외국에 거주하는 동독국민 그리고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상호경제협력조약을 체결한 코메콘 회원국들의 화폐는 헝가리만 제외하고 모두 무제한으로 구입가능하다. 그를 위한 수수료는 구입액의 2%이며 동독중앙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환전할 수 있는 외화는 200 서독 마르크까지이다. 100서독 마르크까지는 동독 마르크와 1:1의 비율로 구매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금액은 400% 즉 1:5의 비율로 계산해서 서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다. 14세 이하의 아동은 50 서독 마르크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여행경비는 동독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이 위임한 기관, 그리고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여행경비를 위한 외환구입 사실은 동독주민은 신분증, 외국인은 체류허가 또는 사회보장번호 또는 어린이 예방접종증명서에 기록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5-276, Ausgabetag 29.12.1989

문서
번호 9

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끌던 동독 개혁정부의 재무장관이 외국에 영주하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동독의 관청에 관한 규정이다. 그들은 3:1의 비율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교환할 수 있다(동독 마르크 3: 서독 마르크 1). 이들이 구입한 금액은 은행의 확인서를 발부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위의 기관에서 은행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시 환전하거나 예치해 둘 수 있다. 동독을 떠나면서 사용하지 않은 동독의 화폐를 다시 동독으로 가지고 들어올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한다. 동독 마르크의 판매와 구입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7, Ausgabetag 29.12.1989



문서 번호 10 동독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
1989년 1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물가관리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중앙은행에 외환구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 외환구좌법이다. 이 법에 따라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관, 사업체 모두 외환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구좌는 도이치마르크로 운영된다. 이 구좌에서는 다른 외환으로 입출금할 수 있다. 구좌 예치금에 대한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좌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구좌가 양도된다.

출처_ DDR-Gesetzblatt 1989 I/26, 276

문서 번호 11 DM 개시 대차대조표(DM-Eröffnungsbilanz)의 소유지(토지)에 관한 임시 평가 방침
1990년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부

내용_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 및 경제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에 포함된 소유지(토지)의 평가 및 즉각적인 DM 개시 대차대조표의 재산평가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재무부에서 임시적인 평가를 위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출처_ 연방재무부, 1990년(BMF, 1990)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자이터스, 경제부차관 폰 뷰어젠, 재무차관 쾰러, 노동 사회부차관 테트마이어,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듀이스부르크 국장, 연방은행 부총재 슐레징거, 드레스덴은행 이사회 대변인 뮐러, 전국상공회의소 대표 기제커 외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수상청장 자이터스와 경제 관련 부처 차관들이 동독의 경제적 발전에 관해 평가하기 위해 서독의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 참가자들이 먼저 동독에서 시장경제적 개혁이 얼마나 진행되었나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당시 개혁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늦고 덜 광범위하고 철저하지 못하게’ 그리고 “본질적이지 못하게 예외규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90년 당시 연방정부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는(그는 재무차관에서 물러난 후 세계은행 총재직을 역임하고 연방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런 원인은 동독 지도부가 ‘가능하면 적은 규모에서 개혁을 실천하고 서독으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나아가 동독의 반체제그룹 중에서 경제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뿐만 아니라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방식의 태도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보았다.

동독의 개혁 중에서도 특히 투자보호협정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난받았다. 이 협정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투자의지를 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투자한도가 전체 자본규모의 49%이며, 조인트벤처 사업의 경우 민간 파트너를 갖는 것이 금지된 것과 같은 점들이 그 예로 지적되었다.

나아가 동독 재무체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며 시장경제적 개혁 이후 기초식량에 대한 가격통제가 해제되면 재무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동독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담당자 / 기관_ 티로 자라친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당시 서독 연방정부 재무부의 국장으로 내독관계와 화폐경제통합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티로 자라친이 작성한 것으로 1994년에 연방재무장관이었던 테오 바이겔이 발표한 독일통일에 대한 회고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12일 동독 재무부 및 재무부 산하 연구기관 해당 담당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서독 연방재무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화폐, 재정 및 세제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 내용이 동독 방문단에게 전달되었다. 동독지역에서는 이러한 세금 관리라든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 세무법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동독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독과 같은 세금 체제로 올바르게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수많은 직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시장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시급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지속적 개혁 과정에 대한 연관성 있는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방재무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화폐통합 문제 또한 함께 다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독 화폐통합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10가지 항목의 단계적인 화폐통합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1. 가격 및 시장 개혁
2. 재정 및 세금 개혁
3. 대외무역교류 자유화 및 국가의 독점적 무역활동 폐지
4. 외환의 인위적 제한 폐지 및 화폐 태환성 확보
5. 현실적인 환율 규정의 도입
6. 화폐 및 은행 시스템의 개혁
7. 화폐 공급의 엄격한 관리
8. 자본 형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 마련
9. 동독시장에서의 환율 안정화
10. 화폐통합

출처_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pp.174-183

담당자 / 기관_ 동독정부, 서독정부

내용_

- 동독과 서독은 1972년에 체결한 동서독 기본 협약과 헬싱키조약을 근거로 유럽 평화 질서 강화를 위한 계약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 상호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 자문위원회(Politische Konsultivkommission)를 설립한다. 위원회 대표는 동독 각료회의 의장과 서독 연방정부의 총리로 한다. 위원회는 양국의 의회와 정부에 권고할 내용을 결정한다.
- 동독과 서독의 부처 및 기타 기관들은 동서독의 정치 자문위원회와 정부를 자문해 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상호 침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양측은 군비축소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 경제 및 통화 연합을 구성하고, 인프라 확대를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한 합의는 1990년에 체결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민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 서독은 동독의 유럽 공동체(EG) 회원국 가입신청을 지원한다.
- 본 협약은 (서)베를린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며, 4대 강국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45A, S. 713-716.



문서
번호 15

협력과 선린우호 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서독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내용_

서독정부와 동독정부는 상호 관계에 대한 8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경제적 차원(Ebene) 및 분야(Bereiche) 간 긴밀한 협력, 공동 기관의 설립
- 경제, 공동 인프라, 환경 보호, 법제도, 노동 및 복지제도 분야는 계약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 공동위원회의 설립: 경제관계강화위원회; 재정, 화폐, 세금위원회; 교통, 상호 우편 및 통신교환개선위원회, 환경보호위원회; 법제도위원회; 노동복지위원회; 문화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건축, 도시 건설, 주택사업위원회; 식품, 농업, 산림위원회; 언론위원회
-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지방위원회 구성
- 기존 위원회 유지: 검문위원회, 교통위원회, 국경위원회
- 공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내 양측 대표단의 지도부 혹은 대표자 선정
- 대표단의 대표들은 반 년 주기로 회동한다.
- (서)베를린 지역으로의 협약 확대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39, S. 695.

담당자 / 기관_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우

내용_

- 동독은 과거에도 이미 국가 간의 연방제에 근거한 통일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의 동독사회의 변혁은 그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좋은 기회로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만 한다.
- 독일통일은 유럽연합과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동서독은 모두 군사적, 정치적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 2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고, 독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모드로우는 독일 문제를 세 단계에 걸쳐 해결하고자 한다. 제1단계: 국가연방제의 요소를 지닌 선린 계약 공동체와 경제, 화폐, 교통 부문의 통합. 제2단계: 공동 조직과 기관들(의회 위원회, 주정부 상원(Länderkammer), 공동 집행기구들)이 설치된 양 독일 국가의 연방체 구성. 제3단계: 단일화된 독일 국가는 공동 의회와 공동 정부+VII를 둔 연방(Föderation) 혹은 연합(Bund)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출처_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동독 외무부 홍보처 발간)



문서 번호 17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
1990년 2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내무부 독일통일 실무그룹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가 공동경제화폐구역의 도입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서독 연방정부는 동서독 공동의 화폐통합을 위한 제안이 독일통일로 향하는 명확한 신호로서 그것은 기본법(헌법)에 명시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협상에 나서는 서독정부의 입장이 11개 조항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_ 연방수상청/연방내무부의 독일통일 정책그룹

(Bundeskanzleramt/Arbeitsgruppe zur Deutschen Einheit des Bundesinnenministeriums)

문서 번호 18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
1990년 2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재무차관 쾰러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재무차관 호스트 쾰러가 수상청과 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의 도입을 위한 제안’의 초안이다. 이 초안은 동독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화폐와 경제통합으로 일정한 시점에서 동독의 마르크는 서독의 마르크에 의해 대체된다. 그 때까지는 동독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종결해야 한다. 그것은 동독에 2단계의 은행체계(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영업의 자유, 임금과 가격에 대한 규제의 해제, 실업보험의 도입과 다른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35014 Ge 33 Band 1

담당자 / 기관_ 서독의 경제발전 평가를 위한 경제전문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위원장 한스 슈나이더, 연방 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이다. 경제전문자위원회는 독일 내에서 가장 권위있고 신뢰받는 기구 중의 하나이다. 1990년 2월 화폐통합의 조속한 실현이 논의되던 시기에 경제전문자문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여러 관점에서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정부의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는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화폐통합이 동독주민이 대량으로 서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오히려 동독주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어서 자기 고향에 남아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동독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폐통합이 경제개혁작업의 선두에 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동독에 도이치마르크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주민들에게 화폐통합을 통해 서독주민이 누리는 생활수준을 곧바로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항상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인데, 현재 동독의 생산성이 서독의 생산성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화폐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생산성이 곧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폐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서독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이 실현된다면 눈에 보이는 소득격차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곧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독일연방정부는 재정균형배분제도를 통해 이런 격차를 좁혀야만 한다. 그것은 결국 공공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구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어야 할 재원이 재정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나아가 동독의 가격구조 또한 왜곡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통합으로 인해 서독에 대해 동독이 갖고 있는 생산입지로서의 경쟁력이 악화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독주민들이 화폐통합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이 깨지면 동독을 떠나는 사람의 물결이 다시 거대해질 것이다. 나아가 화폐통합의 결과 서독과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동독기업은 갑작스럽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화폐통합이 동서독의 경제적 통합의 마지막 단계일 필요는 없다. 문제는 현재 동독의 정부가 아직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폐통합을 서둘러야만 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동독주민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독정부가 동독 이주자의 수용절차



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1/8472, S. 306-308

문서
번호 20

화폐통합 대신 동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1990년 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브레멘대학 교수 루돌프 히켈

내용_

이 문서는 브레멘대학교 경제학과의 루돌프 히켈교수가 1990년 2월에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강연한 원고이다. 당시 그는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판적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학자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이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독과의 화폐공동체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도 얻을 수 없는 위험부담이 높은 새로운 실험의 장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서독연방공화국이 출범했던 상황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이 동독주민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독경제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화폐공동체를 도입한다는 결정은 경제적 이성을 상실한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동독에 안정적인 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동독은 자국의 화폐뿐만 아니라 재정, 경제정책의 자주성까지도 상실하는 것이다.

동서독의 화폐를 1:1로 교환한다는 것은 나아가 총통화량이 약 15%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도이치마르크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동독 국유재산의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은 동독중앙은행에 보관하여 국민경제의 순환서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독에 질이 좋은 소비재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도이치마르크를 지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를 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독주민들이 도이치마르크로 보유하게 된 자금을 서독으로 이주하기 위한 밑천으로 사용하게 될 위험도 있다.

현재 월 1,300 도이치마르크에 달하는 동서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서독이 일방적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동독 중소기업과 주요산업 분야의 확대를 위해 임금보조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독에 실업보험체계를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약 250만 명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회생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시장요소의 도입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조치, 서독의 체제와 유사한 새로운 은행체계의 도입, 친환경기술의 도입, 인프라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이 실시될 경우 약 5년에서 10년 후에 서독과 유사한 발전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은 지금 서독의 화폐정책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기 화폐교환율을 1:3으로 잡으면 적어도 동독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이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1:1의 교환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동독에서 자금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독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일종의 ‘선투자’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 예로 1,000억 마르크의 10년 상환 채권을 발행하거나 연방은행의 이익을 사용하는 것, 서독정부의 국방비 예산을 약 100억 마르크 감축하는 방안, 기업의 재산에 대한 세금, 계획된 기업의 세금 인상분 중에 약 300억 마르크를 포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과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동독의 정치범을 도와주는 것이 그 원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주하고 있다.

출처_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문서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
번호 21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화폐통합의 달성, 재정문제” 정책그룹-정책그룹의 팀장인 서독 연방재무부의 슈타르크 국장이 당시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호스트 쾰러는 그 후에 세계은행 총재를 거쳐 독일연방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과 화폐문제를 담당할 실무그룹과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2차례 전문가회의가 열렸고 동독측에서 이 회의에 아주 협조적이었다. 전문가그룹과 실무그룹의 업무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비공개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문서
번호 22

동독중앙은행 개정법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국가평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도입한 동독의 중앙은행법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1974년 12월 19일에 제정되었던 중앙은행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중앙은행법에 따라 동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의 국가기준은행으로 국채와 국가경제의 회계기구가 된다. 국가의 중앙은행은 화폐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시중은행과 저축금고에 대한 은행감사 또한 중앙은행의 업무에 속한다. 동독 내에 다른 국가의 은행이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도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장은 통화, 화폐정책 및 대출정책의 실현에 관한 법안을 제안할 권리도 갖는다.

출처_ DDR-Gesetzblatt 1990 I/16, 125

문서
번호 23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
1990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동독의 재무장관 발터 지거트, 연방감사원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동독을 대신하여 서독이 의무이행을 보장한다는 합의의 사본이다. 이 합의를 통해 채무보증절차, 연방감사국에 의한 검토와 행정적 검토 등이 합의되었다.

출처_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an die Obersten Bundesbehörden, II A 3-H 1360/8-1/90



문서
번호 24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
1990년 3월 20일

담당자 / 기관_ Präsident der Staatsbank der DDR Horst Kaminsky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중앙은행장 호스트 카민스키가 동독의 저축금고협회의 회칙을 승인하기 위해 내린 지침이다. 이 지침의 부록에서는 저축금고협회의 회칙이 포함되어 있다. 회칙은 저축금고협회의 법적 지위와 협회의 소재지, 업무와 권한, 조직, 이사회, 총회와 자문위원회, 협회 지도부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NN, S. 233-236, Ausgabetag 25.04.1990

1990년 3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경제부장관,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경제부장관 하우스만이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것으로 사회적시장
경제가 성공적으로 동독에 도입되고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수 있기 위해서 동독에 도
입되어야 할 기본틀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독의 사법과 행정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지침으로는 다른 여러 사항
중에서도 생산, 물자제공, 투자 그리고 인력투입 등과 같은 기업가적 결정과 가격문제
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계획지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동독경제의 구
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를 위해 환경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2. 경제화폐공동체가 출범할 때까지 개정되어야만 하는 동독의 법률: 개인소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대지에 대한 법조항의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동
법, 기업법, 공동결정권 그리고 노동쟁의권이 서독 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맞추어서 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3. 늦어도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때에는 효력을 발휘해야 할 새로운 법: 가능한 한 인
민소유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전환, 민간상업은행과 보험의 허용, 타지역의 점포 허용,
가격규제의 해제와 가격감시제의 도입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문서
번호 26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림 장관의 서한-화폐교환비율의 사회적 의미
1990년 3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노동복지부장관 노베르트 블림(Nobert Blüm), 헬무트 콜 연방 총리

내용_

- 동독은 그곳에서도 시장경제의 사회적 요소가 뿌리를 내린 뒤에야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서독정부에 대한 신뢰에 실망을 주어서는 안된다.
- 2:1 화폐교환비율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사회보조금제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서독과 서베를린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화폐교환비율은 서독 연방주들에서도 관철될 수 없을 것이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231, S. 979-980.

문서
번호 27

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의 결정
1990년 4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실

내용_

독일 양국의 정치적 통일에 대한 목표와 이와 관련된 독일 마르크 화폐영역의 동독지역으로의 확대에 대해서 중앙은행위원회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다음 규정을 동독과의 국가조약을 통해 명시한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문서
번호 28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관계
1990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소련 부총리 시타얀, 소련 외무차관 오브민스키, 키브친스키 소련대사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연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1990년 4월에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의 중에 소련 대표단과 서독 연방정부의 대표들이 만나서 동독과 소련 간의 경제관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 대표단은 소련이 서독과 화폐경제사회연합을 구성하더라도 동독이 필요하다면 서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소련에 대한 지불의무를 계속 이행해 주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다. 그에 대해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장관 하우스만은 서독 또한 소련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먼저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우선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동독을 제외하고 소련과 서독이 양국 간의 직접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Amt/212 - 35400 De 39 NA 2 Band 3



문서
번호 29

경제화폐사회통합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
1990년 4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서베를린 시정부 시장실 슈뢰더,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_

이 문서는 서베를린 시장실장 디터 슈뢰더가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에게 보낸 것으로 동서독 간의 경제화폐사회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서베를린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문서를 통해 서베를린 시정부가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통일된 베를린에도 기존의 연방국가와 법칙국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소위 말하는 동독식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독 지도부의 엘리트들을 가능한 한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지자체와 기초단체들, 그 외의 행정단위들 간의 협력과 관련된 조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 동독정부에 의한 통제를 폐지해야 한다.
- 베를린시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베를린 시정부와 협의한다.
- 통일된 베를린의 행정주체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력을 강화한다.
- 동베를린에 소재한 문화기구의 조직과 재정은 국가가 관리한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1990년 4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소련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정부 간에 진행되던 화폐경제사회통합에 대해서 소련측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990년 4월에 소련 외무성은 서독정부가 본에 있는 소련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실현 조약에 관해 동독 대표와 논의하기 위한 실무안’을 전달받았고 그에 관해서 소련의 입장과 질의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서를 동독의 외무부에 전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안을 보면 독일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승전연합국이 독일문제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나아가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동서독정부는 국제조약의 대상국이 유럽공동체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체결한 모든 조약의 규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2. 화폐경제공동체조약의 초안을 보면 2+4회의에서 먼저 협의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초안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 23조에 따라 통일된 국가를 건국’한다는 조항이 그런 문제가 있다.
3. 이 조약이 4대 승전연합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조치와 결정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4. 연방정부의 부처나 연방은행과 같은 서독의 관청이 동독영토에서 활동을 할 경우 동독의 법질서와 동독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을 준수해야만 한다.
5.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는 것은 소련과 다른 국가의 이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6. 소련은 조약 초안 중에서 상호경제원조와 관련하여 동독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2조 12항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7. 동독영토에 주둔한 소련군의 잔류여부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8. 이 조약이 비스무트 독소합작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이 합작회사는 동독의 튜링겐과 작센지역의 광산에서 우라늄을 생산하던 회사로 소련의 핵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9. 이 조약으로 인해 동독과 소련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조약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10.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모두 2+4협상의 외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 문제들이 불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 다른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
1990년 5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연방은행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연방보험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상호경제원조평의회(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유럽 연맹(Europäische Gemeinschaft)

내용_

- 제I장 기초(제1-9항) : 1990년 7월 1일부터 독일 마르크(DM)는 공동 화폐, 연방은행은 발권은행이 된다. 이전의 모든 동독 마르크(DDR-Mark) 관련 의무 및 요구사항들은 독일 마르크로 변경된다. 동독에서는 환경보호를 고려한 사회시장경제가 도입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안정이 보장된다. 동독의 헌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보험감독청은 동독에서도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관청은 상호 간 업무를 지원한다. 동독에는 자유, 사법상의 중재 판정법이 도입된다. 노동재판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동등한 재판소에서 결정권을 위임한다. 서독과 동독정부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II장 화폐통합에 대한 규정(제10항) : 연방은행은 양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연방은행법 제12조). 동독 금융시장은 민간 경제 신용은행 체제, 자유로운 금융 및 자본시장 그리고 엄격히 규제된 이자율 체제를 도입한다. 봉급, 임금, 장학금, 연금, 임대료, 임차료 및 기타 지급수단은 1:1로 전환한다. 다른 모든 의무사항과 관련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2:1로 전환한다. 이는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계좌를 둔 사람과 직장에만 적용된다.
- 제III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제11-16항) : 동독은 고정가격, 높은 고용률, 현대적인 작업장과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1951년 이후 서독과 동독 사이에 존재했던 무역거래는 철폐되고 내국 규제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제거된다. 동독은 국제 경제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상호경제원조평의회 국가들과의 관계는 확대된다. 동독은 서독과 함께 동독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 제IV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제17-25항) :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은 국가 감독 하에 있는 자치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특히 사업자와 고용인에 의해 반반씩 부담된다. 1991년 1월 1일까지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형성된다. 보험의무 및 의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 호봉 등은 서독의 사회보험법에 따라 제정된다.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이 도입되고 이에 따르는 직업교육과 재교육이 실시된다. 이때 특히 여성과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들이 고려된다. 동독 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은 서독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병고 시의 보상지급 등 포함). 이전

까지 획득한 연금 청구권 및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은 동독의 임금과 봉급 수준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 제V장 국가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규정(제26-34항) 제26항(재정정책): 동독의 국가 예산은 서독의 예산구조에 맞게 조정된다. 동독 국가 예산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회 분야, 경제기업, 운수업, 독일 제국철도와 도이치포스트의 운영. 동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삭감: 예산 보조금의 철폐, 인건비의 삭감, 모든 지출내용의 검사, 교육제도의 구조개선 및 연방 구조의 도입(연구 분야 포함). 국유재산은 검토하여 구조개선 및 동독 국가 예산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제27항(신용거래 및 채무):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용 권한은 1990년에 100억 DM에서 1991년에 140억 DM으로 제한된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1990년에 70억 DM과 1991년에 100억 DM의 신용 권한 제한이 적용된다. 제28항(서독의 재정 지급): 서독은 동독 국가 예산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220억 DM 그리고 1991년에 350억 DM을 지원하였다. 서독은 또한 동독 연금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7억 5,000 DM 그리고 동독 실업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20억 DM, 1991년에는 30억 DM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1971년에 도입된 서독과 베를린(서) 사이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및 통관을 위해 통과국이 지불하는 일괄 사용료는 더 이상 서독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서독은 또한 여행자 외화기금에 더 이상 불입하지 않는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제29항(공공서비스): 동독은 연방인원대표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을 규정에 맞게 적용한다. 제30항(관세 및 소비세): 동독은 단계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조세법을 적용한다. 소비세의 제한규정은 철폐된다(담배 제외). 제31항(재산세 및 교통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서독과 동독 사이에 세금제한선 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주권은 간접 받지 않는다. 사전 세금 공제에 대한 권한은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에 귀속되는 매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일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해당 계약 상대자만 과세를 한다. 쌍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생활의 중심 정도 및 영업소의 위치에 따라 과세를 한다.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 상대방의 국내재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제32항(정보교환): 서독과 동독은 세법과 독점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33항(이중과세): 재산세와 교통세의 이중과세는 서독과 동독 재정장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방지하도록 한다. 제34항(재무행정의 구조): 동독은 서독 재무행정의 법에 상응하는 3단계 재무행정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 및 관세 행정청을 설립한다.

지도 원칙에 관한 공동 프로토콜:

- 일반 지도 원칙 : 동독은 유럽공동체법(EG-Recht)을 토대로 한다. 민간경제와 자유경쟁은 우선시된다. 계획규정은 철폐된다. 자유로운 가격형성 및 토지와 땅과 기타 경제 활동을 위한 제품수단의 취득, 권한 및 이용은 자유롭다. 국영기업체는 경제적,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최대한 민영화한다. 서독의 우체국법(Poststrukturgesetz, 우편신고제도



및 통신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단체 및 조합은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국가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 개별법 분야의 지도 원칙: 법원과 의회는 분리되고 재판관의 보고의무는 철폐된다. 토지 저장권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다. 보험 독점체제와 국제무역 독점체제는 폐지된다. 동독의 통계는 서독의 통계에 따라 조정된다. 동독은 서독의 건축법전(Baugesetzbuch)과 공간이용법(Raumordnungsgesetz)에 부합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서독사람들은 동독에서 임시적으로 서독법에 따라 고용될 수 있다. 동독의 노동보호법은 서독의 노동보호법에 맞게 조정된다.

부록

- 명시된 서독법과 법규정에 관한 수정사항 및 독일연방은행, 연방은행감독청 및 연방보험감독청의 규정에 관한 수정 사항은 앞으로 동독에서도 적용되며
- 샤로텐부르크 지방법원(서베를린)은 신용제도의 업무 일부를 위임하게 된다.
- 1973년 12월 19일에 제정된 동독의 통화법(Devisengesetz)(GBI. 1 Nr. 58 S.574)은 폐지되고 동독 국립은행은 해체된다.
-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공장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의 영업활동 또는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법안이 제정된다. 또한 서독과의 합의 하에 외국과의 화물, 서비스, 자본 및 지불 유통에 관한 법안과 규정, 가격형성과 가격감독에 관한 법안, 동독과 서독의 주민등록 관청 간의 데이터 교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독의 세무상담과 회계감사법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1991년 1월 1일까지)
- 그 외에도 고용장려법, 장애인법, 병고 시의 보상지급법, 사회보험법, 연금조정법, 노동법상 중재위원회에 관한 법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제정된다.

출처_ 연방법률관보. 1990 II 537쪽, 제9항, 1998년 6월 9일에 제정된 법(BGBl. I S. 1242) (BGBl. 1990 II S.537, Art 9 3 Gesetz vom 09.06.1998(BGBl. I S. 1242))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Vorsitzende Bergmann-Pohl, Ausschuß Deutsche Einheit der Volkskammer der DDR

내용_

이 문서에서는 동독최고인민회의에 설치된 독일통일위원회가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에 관한 법’을 승인하기를 최고인민회의에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통일위원회의 견해는 이 조약이 거의 완성단계에 달하였기 때문에 동독정부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989년 10월 7일 이전에 동독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의 토지와 산림 매수와 관련된 토지법, 1945-1946년에 시행된 토지개혁과 1945-1949년에 승전연합국법에 따른 토지개혁을 통해 동독주민이 획득한 소유권의 보장, 토지개혁과 승전연합국법의 틀을 벗어나 몰수된 재산의 검토, 투기방지를 위한 규정. 국유재산의 민영화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우선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국가예산의 적자를 보충하고 국가채무의 감축 그리고 국가재원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동서독 간의 환경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혜택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독일의 동쪽 국경이 오더나이스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통일된 독일은 대량학살무기를 포기하며 군사동맹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위원회는 동독정부가 작성해서 입법화해야 할 사안들과 동독정부가 실현해야 할 조치와 규정들의 목록도 작성하였다. 이 문서의 부록에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연맹90/녹색당’의 소수의견이 첨부되었다. 녹색당은 통일에는 동의하지만 동서독정부가 국가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헌이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였다.

출처_ Volkskammer der DDR, Drucksache 24 a



문서 번호 33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4차 회의(부록: 동독기업의 수익성, 도이치마르크로 전환 시 기업의 재정상황과 재산의 가치 평가를 위한 DM 개시 대차대조표)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보기쉬, 신탁청 이사회 임원, 크라우제 청장, 최고인민회의 각 당 대표, 동독경제부 대표, 서독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비서국 대표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의 4차 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1990년 5월까지 진행된 신탁청의 업무와 개별기업의 수익성 검토 그리고 신탁청이 본 재산평가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크라우제 신탁청 청장이 기업의 민영화 상황에 관해 보고하고, 이어서 차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나아가 신탁청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5월 22일까지 이미 273개의 인민소유 기업이 유한회사로 전환되었고, 588개의 기업을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마르크가 도입되고 난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다. 이 문서의 부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토 대상이었던 2,200개의 인민소유 기업 중에서 31%만이 도이치마르크의 도입 이후에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고, 42%는 일단은 적자를 보겠지만 회생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27%는 파산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이치마르크로 전환 시 기업의 수익성 평가와 재정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관한 법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을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서독기업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문서의 부록에서는 나아가-소유권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한-동독기업의 재산평가에 관한 정보와 3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평가기준을 볼 수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A 1/17490

문서
번호 34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
1990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재무부, 법무부 등 각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독일통일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가 통일문제에 관해 동독의 각 부처 담당자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부처의 대표들이 서독정부가 그때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재정적 건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출처_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결과 프로토콜 날짜 없음 (Bundesarchiv: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Undatiertes Ergebnisprotokoll)

문서
번호 35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대한 폴란드정부의 입장
1990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외무성, 동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스제프 스키

내용_

이 문서는 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스제프스키가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과 관련하여 동독 외무장관 메켈에게 전달한 폴란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문건을 통해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문제에 관한 폴란드의 입장 또한 전달되었다.

이 문서에서 폴란드정부는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과 나아가 독일통일이 가져올 수 결과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폴란드정부는 독일통일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독일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폴란드가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별도의 문서에서는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문제에 관해서는 통일된 독일의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번호 36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한 소유권 반환과 관련된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소유권을 물수당했거나 국유재산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3조에는 국유재산에 대해 원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소유자는 해당 토지, 건물 또는 사업체를 관장하는 기관에 해지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토지, 건물과 사업체의 반환은 법률적으로 공증되어야만 한다.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에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사용방법과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1) 그 대상물이 공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거나, (2) 이미 공공목적에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3) 주택건설 또는 주거지 건설에 통합된 경우, (4) 또는 그 대상이 한 사업체에 흡수되어서 그 소유권을 반환할 경우 사업체에 경제적인 해가 될 경우 그것은 소유권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Einigungsvertragsgesetz-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번호 37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재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국유 건물과 부동산은 신탁관리청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소유자가 반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은 공증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소유자는 해지금을 지불해야하며, 그 이후 모든 권리는 새로운/원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Einigungsvertragsgesetz-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번호 38소련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조치
1990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소련에게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재무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서독의 연방정부 입장에서 소련에게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이유는 소련이 자체적인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독이 도와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소련이 당시 안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부족문제도 언급된다. 소련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굳이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서독 연방정부는 소련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독일이 독일통일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이 소련과 다른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무를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소련이 개혁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방의 국가들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소련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독일의 나토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군축과 군사무기감시 그리고 유럽안보협력체제 CSCE의 제도화 등도 포함되었다. 소련은 독일정부가 지불을 보증하고 독일의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소련에 차관을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서독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담보가 보장되고 차관을 상환하면 서방의 은행과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됨으로 소련의 요청을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나아가 소련의 개혁정책이 지속될 때에는 서방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K, 01 (212)-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문서
번호 39

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연방은행, 동독 내각 각료회의

내용_

이 법안은 화폐통합 과정에서 자본과 금융거래를 규정하는 것으로 총 네 파트로 구성되었다: 1. 법률 규정과 실천, 2. 보충조항, 3. 형사처벌과 감독에 관한 규정, 4. 결론과 과도기 규정. 제1부에서는 일반적인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물자거래,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그리고 금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거래제한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이 법은 나아가 거래제한과 거래허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범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9, S. 515-524, Ausgabetag 09.07.1990

문서
번호 40

대외무역과 자본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담당자 / 기관_ Ministerra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내용_

이 문서는 대외무역거래법의 시행령이다. 10장, 7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외무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41/600



문서 번호 41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 동독 중앙은행,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경제화폐통합 직전에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경제화폐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정부 재무부에 한시적으로 '화폐전환 감사국'을 설치한다. 이 기구는 화폐전환 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여부를 검토한다. 동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누가 10만 마르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개인구좌에 보유하고 있는지 1990년 7월 6일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사국은 나아가 동독의 법인체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개설한 구좌 중에 보유금액이 25만 마르크를 초과한 구좌를 검토한다. 금융기관의 정보를 검토, 정리하는 작업을 서비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감사국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는 경우 해당 형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물을 제출한다. 모든 금융기관은 동독의 법인체 중에서 1990년 6월 30일 현재 보유금액이 25만 동독 마르크 이상이며, 1989년 12월 31일과 1990년 6월 30일 사이에 보유금액이 20만 동독 마르크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필히 감사국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동독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화폐전환신청을 제출한 경우 1990년 6월 30일에 보유금액이 5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고, 1989년 12월 31일과 1990년 6월 30일 사이에 3만 동독 마르크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감사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되는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감사업무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동독정부 재무부에서 보상해 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1-502, Ausgabetag 04.07.1990

담당자 / 기관_ Volkskammer der DDR, Präsidium der Volkskammer der DDR

내용_

이 문서는 화폐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도입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폐전환의 실시에 있어서 신고된 보유예금액의 합법적 취득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최고인민회의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가 화폐전환을 위해 신고된 보유예금액의 합법적 취득여부에 의심을 제기할 경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1990년 7월 8일까지 그와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고 1990년 10월 1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내에 항의서를 제출하여 결정사항의 실행을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항의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2주 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위원회에서 그 항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이 2주 내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3, Ausgabetag 04.07.1990



문서
번호 43

베를린 국립은행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중앙은행의 후속기관으로 설립된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법이다. 이 은행의 지주는 동독 국가이다. 동독 국가는 이 은행의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이 은행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이 법을 통해 은행 대출의 인수자와 인수시기가 규정되었다. 이 은행은 특히 화폐경제공동체의 도입 이후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안정 문제, 신탁청을 포함한 법인체와 공공기관의 은행거래문제, 공공사업의 재정과 동독의 경제 인프라, 주택환경 역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지원사업의 재정 조달 그리고 국제무역과 금융거래, 국제금융기구 참여, 은행 간의 거래 등을 관할한다. 베를린 국가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폐 대출시장을 통해 리파이낸스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하고 용자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 또는 사업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 은행 업무의 주목적은 이윤을 내는 것이다. 은행의 기구로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동독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회칙의 변경은 총리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한다. 연간 수입을 통해 조성되는 예비금에 대해서는 동독정부의 재무장관이 결정한다. 재무장관은 나아가 은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기능도 수행한다. 통일 이후에는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연방정부의 재무장관에게 넘겨진다.

출처_ DDR-Gesetzblatt 38, 504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

내용_

이 문서는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의 실현 이후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이 외국 또는 서독의 계약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무 또는 채권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의 채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동독 경제부에 정리특임관실을 설치한다. 대외무역업체들이 자본회사를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본회사가 대외무역업체의 후계자가 된다. 자본회사의 창설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업체가 보유한 채권과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난 후에 남은 만큼의 재산을 자본금으로 넘겨 받을 수 있다. 재산의 가치는 1990년 7월 1일자로 회계정산한 대차대조표에 의해 결정된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외무역업체들에 대한 회계정산을 마치고 그때까지 남은 채무와 채권관계는 신탁청에 의해 설립될 자본회사에 위임하도록 한다. 이러한 청산작업은 1991년 3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한다.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이 더 많아서 얻게 되는 재원은 신탁청으로 이전한다. 대외무역업체의 은행구좌는 독일대외무역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한다(이 은행은 동독에서 국가 간의 차관제공, 재정거래 그리고 채권과 채무관계를 처리하던 특수은행이다). 대외무역업체의 정리특임관실에 의해서 작성된 인력계획서는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달 소요되는 재정 또한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리특임관은 1990년부터 매월 정리현황에 관하여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한다. 이미 자본회사로 전환된 대외무역업체 또한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2, S. 662-664, Ausgabetag 20.07.1990

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 조약)에 관한 제1차 협상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Günther Krause) 정무차관(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바이에른(Bayern)주, 함부르크(Hamburg)시, 바덴-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베를린(Berlin)시, 유럽공동체위원회(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의 1차 협상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독정부는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에 찬성하며 1990년 12월에 독일 전역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1대 전 독일 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는 조약을 제2차 국가조약이 아니라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으로 칭하도록 한다. 동독정부의 입장은 전 독일 총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 동독지역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동독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서독정부는 '통일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서독 기본법 제23조는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지역에서 스스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독정부는 가입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통일조약의 초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조약의 협상과 관련하여 동독정부가 협상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일조약은 양측의 입법 기관으로부터 2/3 찬성을 받아 비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를 조약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서독정부는 전 독일 선거가 편입 전이나 후에 실시되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서독정부는 전 독일 의회에 독일연방 수도에 관한 결정을 위임하기를 원하였다. 반면 동독측은 통일독일의 수도 문제를 '통일조약'을 통해 규정하기를 원하였고, 베를린을 수도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동독정부는 그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서독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명칭과 기존의 '국가(Deutschlandlied)'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동독측은 통일된 독일의 국호를 '연방독일공화국(Deutsche Bundesrepublik)'으로 하고 국가도 가사 내용상 기존의 도이칠란트리트의 멜로디와 잘 어울리는 동독 국가를 1절로, 서독 국가의 3절을 새로운 '국가'의 2절로 구성하여 새로운 독일 '국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 동독정부는 신탁관리청(Treuhandstelle)의 업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오로지 동독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독지역에 새로이 만들어질 연방주의 재건을 담당할 ‘재건부(Aufbauministerium)’ 혹은 동독의 주정부 총리들로 구성된 특별 회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동독측은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적 목표(Staatszielbestimmung)에 관한 조항과 사회적 보장권에 관한 조항은 개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 회담 참석자들은 기타 절차와 차후 일정에 합의하였다.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문서
번호 46

독일통일 실현 조약(통일조약) 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 1990년 7월 9일

담당자 / 기관_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에른주, 함부르크시, 바덴-뷔템베르크주, 니더작센주, 베를린시), 유럽공동체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동독지역이 서독 연방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후 가입과 관련하여 동서독정부가 논의하여야 할 주제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다. 통일조약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통일조약의 기본적 구조; 조약의 전문과 대상; 동독지역에 신설될 5개 주의 서독 연방 가입; 기본법상 요구되는 개정; 법 통합 및 행정 통합의 제반 원칙;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조약들의 처리 문제
- 신설 주를 위한 재건부 설치
- 베를린: 독일의 수도에 관한 기본 결정
- 재정 문제: 동독의 예산 시스템을 서독의 예산 시스템으로 재편
- 신탁관리청
- 유럽공동체 법 도입과 신설 5개 주에 대한 과도기 규정의 강제성
- 코메콘(이하 RGW)과 소련, 그리고 기타 코메콘 회원 국가들과 동독이 체결한 경제 조약의 처리를 위한 법적 규정
- 국제법상의 조약: 서독과 동독이 각각 국제법상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필요에 따라 조정
- 안보 정책상의 문제점(2+4 협상의 결과들)
- 대학, 학교, 교육, 문화: 주정부 헌법과 주정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과도기 규정을 적용
- 동독지역의 소수 민족 권리 보호

출처_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문서
번호 47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저축금고지침
1990년 7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지침은 저축금고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크레딧차입, 저축금고 자산의 투자(예를 들어 신용기관 또는 부동산), 서비스와 기타 업무(주식거래, 외환거래, 금고의 대여) 등을 규정한다. 이 지침의 부록에는 저축금고 회칙의 견본이 수록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5-1279, Ausgabetag 30.08.1990

문서
번호 48

어음에 대한 이중과세 제한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3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_

이 지침은 어음거래에 대한 세금규정이다. 동독에서도 1990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어음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9, Ausgabetag 30.08.1990



문서 번호 49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령권을 연방금융감독원에 위임하는 규정

1990년 9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신용기금 연방관리청, 독일연방은행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용자기관에 대한 감시를 연방관리청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정은 연방중앙은행에 자문을 구하고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 28조 1항의 조치에 따라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47, S. 1995, Ausgabetag 15.09.1990

문서 번호 50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산에 관한 법(DM-대차대조법)

1990년 9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신탁청, 연방법무부, 연방재무부, 연방경제기술부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규정에 따라 동독의 기업과 콤비나트를 전환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1990년 7월 1일에 동독에 거주하였던 모든 상인이 1990년 7월 1일 까지 도이치마르크로의 전환에서 소유하게 될 재산시설 목록과 재정결산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69-1193, Ausgabetag 28.09.1990 (Gesetz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gesetz]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51

회폐통합 과정에서 회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

1990년 10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신용 관리국, 독일연방은행,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젤

내용_

이 문서는 회폐통합 과정에서 금융과 대외무역을 담당하였던 기관의 재정결산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먼저 두 개의 개념을 정의한다.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동독에서 은행업무를 담당했던 기업은 금융기관이라 부르고 1990년 7월 이전에 동독정부의 지시로 동독 외부에서 다른 국가 또는 외국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졌거나 대외무역을 담당했던 기업은 대외무역업체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대외무역업체의 사업 전체 또는 정리를 목적으로 기업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는 연방금융감독원과 도이치뱅크에 1991년 3월 15일까지 회폐통합 이후 재정결산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연방금융감독원에서 회폐전환 과정에서 대차대조법에 의거하여 이들 금융기관과 기업의 보유재산의 가치와 채무가 정확하게 전환되었는지 검토하고 결산서를 확인해 준다. 이 절차는 회계사에 의한 검토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의 자산가치와 채무는 1990년 7월 1일자 재정결산을 근거로 산정된다. 연방금융감독원은 이들에게 회폐전환과 관련한 모든 업무자료를 비롯하여 자산과 채무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규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59, S. 2394-2397, Ausgabetag 03.11.1990

담당자 / 기관_ Günter Pehl(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Deutsche Bundesbank, Bundeskabinett, Regierung der DDR, Vorsitzender des Ministerrats der DDR Hans Modrow, Ministerpräsident der DDR Lothar de Maizière, Bundeskanzler Helmut Kohl, F.D.P.

내용_

이 문서는 노동조합의 시각에서 화폐통합문제를 분석한 논문이다. 논문의 핵심적인 질문은 신속한 화폐통합에 대한 대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독의 경제위기가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하는 점이다. 이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구동독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지는 반면 서독은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서독경제의 호황은 1990년 하반기 이후 심지어 더 촉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독이 누리던 호황은 1980년대에 전혀 없었던 현상이었다. 1990년 들어 서독경제는 생산과 고용 모든 부분에서 확장세를 보였고, 생산시설은 생산력의 90%까지 가동하고 있다. 서독경제가 이렇게 팽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특히 1990년 하반기에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수요가 급격하게 팽창하였기 때문이었다. 화폐통합으로 동독지역에도 서독의 마르크가 도입되면서 동독의 민간수요의 대부분이 서독기업에 의해 충족되게 되었다. 만일 동독으로부터의 수요가 없었더라면 서독경제의 총생산량이 5.5%가 아니라 약 4% 정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서독 국민총생산은 1990년에 2조 4,400억 DM이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2,435억 DM으로 서독에 비해 약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체제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기업의 생산품의 판로가 급격하게 사라졌고 그로 인해 생산활동 자체를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동유럽 기업들과의 거래도 점점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동독산업의 생산 자체가 반으로 줄었다. 많은 기업들이 신탁관리청으로부터 받는 차입금으로 유지되었다.

경제전문자문위원회와 연방은행장과 같은 경제전문가들이 동독경제를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서독 마르크의 도입, 즉 화폐통합은 이런 체제전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1990년 2월 7일에 동독정부에게 신속한 화폐통합을 제안하였다. 사민당 내에서도 신속한 화폐통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경우 신속한 시장경제적 개혁을 원하지 않았지만 로타 드 메지에르는 신속한 화폐통합을 선호하였다.

문제는 화폐통합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헬무트 콜 수상은 도이치마르크와 시장경제 그리고 서독의 사회법의 도입을 통해 동독에서 경제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순진한 발상이었다. 자민당이 요구한 대로 동독에서 기업세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다. 연방정부는 독일통일을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적 부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로 인해 서독 재정과 서독주민들이 재정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출처_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Jahrgang 52, 1991, Heft 1, S. 26-37, <http://library.fes.de/gmh/main/pdf-files/gmh/1991/1991-01-a-026.pdf>

문서
번호 53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도입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

1991년 1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젤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재무장관이 연방회의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농림산업부장관이 신청한 5,000만 마르크의 추가예산을 집행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추가예산을 집행하게 된 이유는 동쪽지역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적 발전이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해서 투자금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3/91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 장관 클라우스 킨겔, 신탁청

내용_

이 문서는 1991년에 연방정부 법무장관의 명의로 발표된 개정안으로 기업의 자본금과 재정 결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7월 1일에 동독에 본사를 두었고 상업법에 따라 회계의무를 갖는 기업은 1990년 7월 1일 화폐교환 당시 DM-대차대조표와 시설 장비목록 그리고 정산방식과 평가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조치는 국영 콤비나트와 기업, 독립적인 시설 그리고 기타 경제단위로 등록된 모든 단체, 인민소유 재산과 동독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동독 국영기업의 지사, 주식회사로 전환과정에 있는 기업 외에 지자체의 모든 경제 관련 단체에 해당한다. 1991년 6월 30일까지 현재 창립 또는 전환 과정에 있는 기업은 1990년 7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기업은 나아가 상법 240조에 따라 1990년 7월 1일자로 시설장비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990년 7월 30일 이후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이전받은 기업은 이전받은 재산도 목록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업의 토지와 건물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또는 계약에 의해 제약조건이 존재할 경우 그것 또한 명시하도록 한다. 국가와 신탁청에 대한 채권, 채무는 별도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채무의 경우 용자조건을 설명하도록 한다. 화폐교환 시의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해 재산과 채무를 다시 평가하도록 한다.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중립적인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동독의 경제부가 추천하였던 가치평가기준에 따라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동독 마르크화로 결정된 채권은 2:1의 교환비율로 도이치마르크로 전환한다. 임대료와 임차료 등과 같이 1990년 6월 30일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1의 비율로 전환한다. 1990년 7월 1일 이전부터 있었던 정부 지출 금액 또한 2:1로 교환한다. 그 외의 임금, 급여와 장학금, 연금 등은 1:1의 교환율이 적용된다.

각 기업과 경제기관이 제출한 재정대차대조표와 그 부록에 대한 감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제감사규정에 따라 공인된 회계사와 회계회사에서 진행한다. 연방법무장관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회의의 동의와 연방정부 재무장관과 경제장관의 동의 하에 기업의 자본금 자료에 대한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71-993, Ausgabetag 26.04.1991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장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젤, 연방경제장관 헬
무트 하우스만

내용_

이 문서는 통일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유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해결재산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해결재산에 관한 규정법은 동독정부 하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상없이 또는 아주
낮은 보상만 받고 인민소유재산으로 몰수되었던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규정하는 법안이
다. 이 법은 건물이 세워진 대지와 관리비용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낮은 임대료로 인해 높
은 채무를 지게 되면서 인민소유로 전환되었던 건물에도 해당된다. 이 법은 나아가 국가가
관리해 오던 동독을 탈출하였거나 불법으로 떠난 동독주민의 재산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나아가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 사이 나치체제에서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또
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박해받고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몰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재
산을 상실한 시민과 단체의 재산권에도 적용된다.

개인과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재단이 합법적으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재산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대지와 건물의 이용방식이 이미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공동주택 또는 주택단지의 건축에 이용되었을 경우 그리고 건물의 반환으로 인해 기존 기업의
생산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 또한 재산권이 반환되지 않는다. 몰수된 기업에
대한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몰수되었던 시점 이후의 경제발전,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업
의 조건이 유사할 때에는 그것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원소유자에게 재산을 반환해 주지 못하
거나 원소유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기업이 인민소유로 몰수되었을 당시의 가치에 따라 도
이치마르크로 보상해 준다. 당시 동독에서 매도한 가격 또는 포기하면서 받은 금액은 보상액
에서 제하도록 한다. 이때 계산기준은 동독 마르크와 서독 도이치마르크 간의 2:1 비율이다.

여러 사람이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기업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기업으로 또는 사업
장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 기업의 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신청에 의
해 해당 관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람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평
의회에 분할문제에 관해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관할할 관청이 연방주 차원에서 설치될 때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관청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 나아가 연방주 정부는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관할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해결재
산문제에 대한 규정을 관할하는 청급의 연방관청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를 담당할
연방관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57-970, Ausgabetag 26.04.1991



문서 번호 56 동독기업의 인수-도이치뱅크가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한 사례
1991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Deutscher Bundestag, Fraktion der SPD i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AG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 사민당의 의원이 도이치뱅크에 의한 독일신용은행 인수사례에 관해 질의한 것에 연방재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 의원들은 도이치뱅크와 독일신용은행 간의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었는지에 관해서 밝히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이 도이치뱅크에 의해 인수될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이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연방정부는 인수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53

문서 번호 57 베를린은행에 의한 베를린국립은행의 인수
1992년 1월 6일

담당자 / 기관_ Berliner Bank, Berliner Stadtbank

내용

서베를린의 베를린은행이 1991년 6월 27일자로 신탁청이 관리하고 있는 동독의 마지막 신용기관인 베를린시은행을 4,900만 DM에 인수하였다. 베를린시은행이 보유한 자기자산은 4억 9,570만 DM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과정에서 신탁청이 인수의사를 가진 다른 기관과 진지하게 협상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베를린은행은 베를린시은행의 직원 1,090명의 계속 고용을 보장할 의무도 없었다. 베를린은행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 수 있는 경우에만 750명 정도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인원마저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처_ Der Spiegel, 2/1992, <http://magazin.spiegel.de/EpubDelivery/spiegel/pdf/13679257>

담당자 / 기관_ Land Hess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Hans Eichel;
Freistaat Thüring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Bernhard Vogel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튀링겐주와 서독의 헤센주가 공동으로 저축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협약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헤센주와 튀링겐주는 두 연방주의 주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축금고(Sparkasse)의 지역 금고협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헤센-튀링겐주 공동의 저축금고협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기구의 목적은 튀링겐주의 저축금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두 연방주의 개발기회를 증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조약은 저축금고, 지로구좌협회, 공동의 주립은행, 주택은행과 보험을 포괄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두 연방주는 헤센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가 튀링겐지역의 저축금고와 그 협회를 받아들여서 헤센-튀링겐 공동의 기구로 존속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협회의 명칭은 헤센-튀링겐 저축금고 및 지로구좌협회이다. 이 협회는 비영리목적의 단체이다. 이 협회는 저축금고를 통제하기 위해 운영부서 외에 감사부서를 둔다. 이 기구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은 헤센과 튀링겐 주정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며, 저축금고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권 또한 양쪽 주정부가 갖고 있다.

헤센 주립은행은 헤센-튀링겐-지로구좌센터로 개칭된다. 이 은행의 지주는 헤센과 튀링겐주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이다.

헤센과 튀링겐주는 각 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동일한 저축금고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과는 별도로 두 연방주의 감독원이 각 지역의 저축금고를 관리감독한다. 그리고 두 기관은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

출처_ HessGVBl. I S. 190, ThürGVBl.S. 291



문서 번호 59 1991년도 연방은행 사업보고서
1992년 4월 2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länder, Deutsche Bundesbank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은행의 1991년 사업보고서이다. 1991년 독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이 보고서에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동독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제도적으로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동시에 구동독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서독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의해 그리고 민간경제에서 대규모 투자가 없이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서독에서 진행하려던 사업들 중에 시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어둘 필요도 있다. 더욱이 통일된 독일은 그 크기나 국민경제적 능력으로 볼 때 서부유럽의 통합에서 핵심적인 국가의 하나이며 유럽 전체의 변화과정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형성되는 유럽대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주변국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독일은 이제 40년 동안 분단되어 있던 동서독 두 지역의 주민들이 균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첫걸음을 디뎠다. 무엇보다 안정된 구조와 강력한 경제성장은 서독경제로 하여금 높은 공적인 이전지출을 통해 구동독지역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신연방지역에서 형성된 구매력은 서독지역의 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성장동력을 가져왔고 구동독지역에서도 1991년에는 서독으로부터 제공되는 막대한 이전지출에 힘입어 서서히 경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시에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성과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구동독지역 주민의 삶의 수준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 높은 실업률이 발생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무거운 유산이라고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_ Geschäftsbericht der Deutschen Bundesbank für das Jahr 1991, Selbstverlag der Deutschen Bundesbank, Frankfurt am Main

담당자 / 기관_ Land Brandenburg, Land Mecklenburg-Vorpommern, Freistaat Sachsen,
Land Sachsen-Anhalt

내용_

이 문서는 1992년 12월 17일에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등 4개의 신연방주가 체결한 저축금고협회에 관한 조약문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축금고 동부협회의 회원은 이 협약을 체결한 신연방주의 저축금고와 지역금고들이다. 본 협의회는 공법에 따른 법인체로 협의회는 기관으로는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사무총장단이 있다.

협의회는 저축금고를 지원하고 저축금고 및 감독기구를 자문해주며, 저축금고 조직을 관찰하는 기구를 도와주고 회원조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 협의회는 각 연방주에 개별적으로 자문기구를 둔다. 이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제안권도 갖는다. 협의회는 개별적인 연방주에 직접 연관되는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그에 관해 미리 해당 연방주에 통보하여야만 한다. 협의회는 나아가 감독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그리고 협의회는 각 연방주의 감독을 받는다. 각 연방주의 감사원은 공동으로 협의회에 예산과 회계를 검토한다. 나아가 조약을 체결한 연방주들은 통일된 저축금고법을 도입,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 합의문은 모든 주들이 승인서를 제출하면 효력을 발휘하며 그 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출처_ https://www.osv-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OSV_Staatsvertrag_Lesefassung-26-05-09.pdf



문서
번호 61

서독을 방문한 동독주민에게 제공된 환영금의 재원과 총액
1993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내무부차관 바펜슈미트, 연방의회 의원

내용_

이 문서는 사민당 소속 슈미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 내무차관인 바펜슈미트가 답한 것이다.

서독은 1959년 이후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주민들에게 환영금을 지불해 왔다. 이를 위한 비용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나아가 1964년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환영금 외에도 각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가로 환영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수치는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1984년에서 1989년까지 연방정부는 약 20억 마르크를 환영금으로 지출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45, S. 11

문서
번호 62

사회시설의 구채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1993년 6월 3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PDS/Linke Liste)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바라라 뢰일 민사당 의원이 제출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이 답변에서 연방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일조약 21조 21항에 따라 동독의 사회시설의 소유권은 대부분 구동독의 지자체로 양도
되었다. 그 결과 구동독지역의 지자체가 동독체제 하에서 사회시설이 책임져야 했던 채무
도 지자체가 책임지게 되었다. 독일신용은행이 사회시설에 제공한 크레디트는 1990년 7월 1
일 현재 약 50억 DM이었다. 구동독 지자체의 사회시설이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신탁청이 담당하는 일이 아니다. 구동독의 주택회사가 안고 있는 구채무는 법적으로 구속
력이 있는 부채이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관계는 새로
운 관계에 맞게 조절한다는 특별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독의 법을
따라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통일조약 22조 4항은 동독 주택회사의 주택이 안고 있는 부
채는 신연방주의 지자체로 양도된다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신연방주 지자체의 현재
재정상황이 그렇게 열악한 것만은 아니어서 사회시설의 구채무를 자체적인 예산으로 상환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5075



문서 번호 63 구동독채무상환기금법 개정법
1993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내용

이 문서는 구동독채무상환기금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이 기금을 통해 1995년에 신탁청과 채무청산기금 그리고 지자체 주택회사의 구채무 일부가 연방정부의 특수자산으로 통합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 이 기금이 설립되었을 당시 부채는 총 3,360억 마르크(약 1,717억 9,000 유로)였다. 이 부채의 이자와 원금은 연방정부가 부담하였다. 이 기금의 설치는 연대협약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연방은행의 수입 중에서 35억 유로를 상회하는 부분은 이 법의 6조에 따라 이 기금으로 직접 흡수되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통해서만도 508억 유로를 갚을 수 있었다.

구동독구채무상환기금의 독일어 표현은 Erblasttilgungsfond이다. 이 명칭은 역사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독일어로 Erblast라는 표현은 이 기금을 통해서 통일된 독일의 연방정부가 지는 부담은 연방정부의 정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라는 국가가 40년 동안 존속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기금이 구채무를 상환하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래의 명칭이 갖는 의미를 상실하였지만, 이 명칭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수상이 구동독구채무상환은 종결되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정책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1,000억 유로를 더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30, S. 984-986, Ausgabetag 26.06.1993 (Artikel 37 des Gesetzes über 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finanziellen Erblast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zur langfristigen Sicherung des Aufbaus in den neuen Ländern, zur Neuordnung des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s und zur Entlast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Gesetz zur Umsetzung des Föderalen Konsolidierungsprogramms)

담당자 / 기관_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kanzler Helmut Kohl,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Bundesamt für Finanzen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방정부가 통일 이후에 실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서독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처리 사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마르크를 도이치마르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악용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화폐교환 전 1990년 6월 29일에 동독정부가 화폐교환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을 도입하였고, 그 법은 통일조약을 통해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으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 법에 따라 동독 재무부에 ‘화폐전환감사국’이 설치되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이 부서는 연방재무부에 소속되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반환요청을 금융기관에서 주관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였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경제법과 일반행정법의 통화규정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일반 시중은행이 처리하게 하는 것은 무리였다.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그리고 전문성면에서도 시중 금융기관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미 베를린에 외청을 설치한 연방재정청으로 이관되었다. 이 부처는 연방재무부에 속하는 기관이다. 감사국에 근무하는 33명의 직원은 연방재정청의 직원으로 신분이 변화한다. 이 부서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약 540만 마르크의 인건비는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이 법률에 의해 감사절차가 확대됨으로 인해 약 1,000만 마르크까지 감사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환수받은 금액은 화폐전환균형기금으로 처리된다. 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 법은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법의 기준을 준수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47, S. 1522-1524, Ausgabetag 04.09.1993

담당자 / 기관_ 라인하르트 폴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정부 출연 경제연구기관인 독일경제연구소(DIW)에서 화폐통합의 결과에 관해 작성한 분석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서독과 계획경제가 주도하는 동독의 화폐가 서로 통합된 것은 유례가 드문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전환이 최적의 양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마련하는 준비는 대단히 어려웠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합의한 화폐전환비용은 안정성, 경쟁력, 예산 및 사회정책을 고려한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점을 찾은 일종의 합의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독의 구(舊)부채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처리규정이나 동독 고정자산에 대한 주민의 배분비율이 불충분한 수준이었던 점 등은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었다.

이와 반대로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절하 및 자본시장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 등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폐통합 및 정치통합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들을 극복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화폐 관련 변수와 실질적 변수 사이에 성립된 관계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잠재적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화폐량 정책의 적용을 어렵게 했고, 특히 적절한 화폐량 책정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난관으로 작용했다.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진행한 화폐량 책정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연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 놓은 화폐량 목표는 그 운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설정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화폐량의 변동 양상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비록 1991년 및 1992년의 기간 동안에는 서독에서 현격한 속도로 물가인상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는 팽창적인 화폐 정책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방은행이 이러한 진행 상황을 전담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및 1992년 기간 동안 나타난 서독의 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급격하게 불러오게 되었고, 아울러 물가 인상의 압박 역시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결국은 소득의 규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과 경기침체의 가능성 또한 더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은행에서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경제 상황에 너무 늦게 대응했으며, 충분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다.

출처_ 독일 연방은행, DIW 베를린

문서
번호 66

은행에 의한 신탁청 관리기업의 인수
1995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Treuhandanstalt, Bankenverbände,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in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Irmgard Karwatzki(CDU),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Christa Luft(PDS)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모드로우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민사당 소속 크리스타 루프트 연방의회 의원의 질의에 이름가르트 카르바츠키 연방재무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신탁청 그리고 은행협의회는 현재 신연방지역의 기업을 위한 은행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 경에는 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차관은 나아가 은행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여덟 개의 기업과 그 외에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15개의 기업을 밝혔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7



문서
번호 67

바이에른 주은행에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의 매각
1995년 3월 28일

담당자 / 기관_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PDS)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민사당의 바바라 뢰 의원(Barbara Höll)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답변을 통해 연방정부는 독일신용은행이 1990년 4월 1일에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의 자산은 연방예산에 이양되지 않았다. 독일신용은행의 민영화는 1994년 8월 30일에 베를린에서 신탁청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작되었다. 1994년 12월 29일에 도입된 기업과 관련된 업무의 이양에 관한 신탁청의 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연방정부가 독일신용은행의 소유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독일신용은행의 매각을 지연시키지는 않았다. 바이에른 주은행의 경우 매각계약을 통해 채권이 아니라 독일신용은행의 주식을 획득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의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1995년 연방예산안 초안 제0802장 항목 133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933

문서
번호 68

협동조합의 매각
1995년 10월 13일

담당자 / 기관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l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Gerald Thalheim(SPD)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탈하임 사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연방재무부차관 쿠르트 팔트호이저가 답한 것으로 탈하임 의원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이다. 그는 독일신용은행이 농업의 구채무를 상환하라고 막데부르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45

문서
번호 69

신연방주의 구채무 청산에 관한 연방감사원의 입장에 관하여
1995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r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Wieland Sorge(SPD); Bundes-
rechnungshof; Deutscher Bundestag

내용_

1995년에 연방감사원은 통일 이후 동독의 구채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하였다.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빌란트 조르게 사민당 의원이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가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은행과 신용체계를 서독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자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동독지역의 기업이 생산의 효율성이 높지 못하고 구매자들이 대금을 정확히 지불하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자부담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980



문서
번호 70 동독의 구채무-연방의회 질의와 응답
1995년 1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Deutscher Bundestag;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Jürgen Stark; Abgeordnete des Deutschen Bundestages; Bundesrechnungshof;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의원들이 제출한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의 슈타르크 재무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이 질의는 동독의 구채무와 동독 금융기관을 서독의 시중은행이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연방감사원이 1995년 9월 27일에 작성한 보고서에 관한 것이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는 1995년 10월 11일에 연방의회 예산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증권법과 신용기관법에서 규정한 정보비공개원칙 때문에 슈타르크 차관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답변할 수 있었다. 연방감사원이 해당은행의 동의 하에서만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를 인수하려는 금융기관이 별로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바이에른 주립은행이 선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슈타르크 차관은 나아가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동서독 은행 간에 체결된 계약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당시에 연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방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매각과정이 은행에게 유리하고 공공예산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슈타르크 차관은 이러한 비판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독 은행들이 구동독에서의 업무를 위한 건물을 짓고 인력을 훈련하는 것과 같이 인프라구축에 많은 투자를 했어야만 했다고 하였다. 구동독지역의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인력이 약 두 배 증가하였다. 동독은행의 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은 총 110억 DM 이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13. Wahlperiode, 73. Sitzung, Bonn, 29.11.1995

담당자 / 기관_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동독, 신탁관리청

내용_

이 문서는 1998년 정권을 잡게 된 사민당 슈뢰더 수상 시기에 재무차관을 역임한 하이너 플라스벡이 1996년에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에 조언을 주는 형식으로 작성, 발표한 영어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입

- 통일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거나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간 공적 자금의 규모는 1993년 기준 1,700억 마르크에 달했다.
- 서독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및 국고 세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분단과 관련된 지출비용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 러시아 서부지역 주둔군(Westgruppe der sowjetischen Truppen) 철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통일독일의 국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산출된다.
- 동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일비용에 포함시켜 정산해서는 안된다.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

2.1 자본 수요에 관한 초기 견적

- 초기에는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필요 자금을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동독의 경우 국고 수입은 높은 반면, 국고 지출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2 동독에 대한 서독 공적 자금 지급

- 1993년에만 1,700억 마르크의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10억 마르크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매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원되며, 저금리 융자도 제공된다. 동독에 대한 이러한 이전지출금은 자본시장 및 세수로 감당하도록 한다.
- 이전지출금을 서독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과 관련된 지출비용이 해소되었고, 동독에서의 경제 수요는 서독경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각 분야에 따른 자원 분배

- 이전지출금은 대부분 사회적 영역과 교통체계 정비에 사용된다.
- 서독의 각 주정부에서 분담해야 할 기여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

- 통일 이후 그림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는 독일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채무청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 및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으로부터 충당된다.
- 독일통일기금은 새로운 재정배분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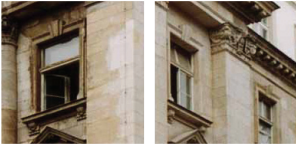


- 채무청산기금에서는 동독의 부채 및 채무를 인수했다.
 - 가장 중요한 그림자 예산은 신탁관리청이 담당하며, 신탁관리청의 최종 대차대조표는 (1994년 말 기준) 최소 2,750억 DM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 통일 이후에는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특별기금 및 개발촉진은행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동독 및 서독 국영 철도는 1994년 초 합병되었지만, 예산은 각각 별도로 관리된다.
4. 동독 자본재
- 1989년 동독은 8,000억 동독 마르크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물가수준: 1985년). 이는 서독 마르크로 약 3,190억 마르크에 해당하게 된다(물가수준: 1990년).
 - 경제·화폐 및 사회통합(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으로 인해 수많은 공장이 폐쇄되었고, 제조산업에서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고무적인 의견으로는 동독의 자본재가 1,500억 마르크에 달하는 동독 투자로 인해 향후 6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하게 되고, 아울러 350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출처_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년. German Unification—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p.189-200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119-01



화폐통합

동서독 통일과정 정책문서

문서집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화폐개혁 이후 가격과 경제정책의 기본지침에 관한 법	1948년 6월 24일	통합경제영역 경제위원회 위원장 쾰러 (초대 서독 연방의회의장)	Gesetz- u. Verordnungsblatt des Wirtschaftsrates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 1948, Nr. 12, S. 59 f.
2	서독과 동독 간의 통상협정 (베를린 협정)	1951년 9월 26일	독일 은행, 동독 정부 내독교역 무역과 물자조달성	Bundesanzeiger, 1951, Nr. 186, S. 3 ff
3	내독교역의 신용한도	1975년 2월 20일	연방정부 내독성, 바이허트국장	Bundesarchiv B 288/426
4	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	1989년 11월 6일	Dr. Wilms, 연방내독관계부 장관(BMB) Dr. Priesnitz, 연방내독관계부 대표(BMB) Dr. Sudhoff, 외무부 대표(AA) Dr. von Würzen, 연방경제부 대표(BMWi) Dr. Knittel, 연방교통부 대표(BMV) Dr. Florian, 연방우정부 대표(BMP) Dr. Bertele, 상임대표국 대표(Stäv) Dr. Duisberg (고위 당직자)	독일연방 공문서관, B 136/201 69,221 - 14223 Sta 8 Bd. 3. - 뒤스부르크 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1월 6일. 복사본: St Bende, GL 22. (BAreh, B 136/201 69,221 - 14223 Sta 8 Bd. 3. - Vorlage des MDg Duisber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Rudolf Seiters,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5	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 - "책임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 공동체"	1989년 11월 17일	동독 각료 회의(Ministerrat) 의장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1989년 11월 18/19일자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지
6	10-개항-프로그램 - 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 총리(Bundeskanzler)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Hans Jürgen Küsters).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Nr. 122A(Anlage) 643-644.
7	루데비히(Ludewig) 국장이 자이티스(Seiters) 연방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년 12월 13일	연방수상청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S. 643 f.
8	동독 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동독 중앙은행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5-276, Ausgabetag 29.12.1989
9	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1990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마르크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7, Ausgabetag 29.12.1989
10	동독 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	1989년 12월 21일	동독 재무-물가관리부	DDR-Gesetzblatt 1989 I/26, 276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1	DM 개시 대차대조표(DM-Eröffnungsbilanz)의 소유지(토지)에 관한 임시 평가 방침	1990년	연방재무부	연방재무부, 1990년 (BMF, 1990)
12	동독의 화폐와 경제문제에 관한 전문가 초청 연방정부 간담회	1990년 1월 9일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자이더스, 경제부 차관 폰 뷰어젠, 재무차관 쾰러, 노동사회부 차관 테트마이어, 수상청 루데비히국장 듀이스부르크국장, 연방은행 부총재 슐레징거, 드레스덴 은행 이사회 대변인 쾰러, 전국상공회의소 대표 기제커 와 다수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13	10개항 프로그램	1990년 1월 12일	틸로 자라친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p. 174-183
14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협약 - 동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7일	동독 정부, 서독 정부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45A, S. 713-716.
15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 - 서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39, S. 695.
16	모드로의 계획 - “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	1990년 2월 1일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동독 외무부 홍보처 발간)
17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	1990년 2월 7일	연방 수상청/ 연방 내무부 독일통일 실무그룹	연방 수상청/연방내무부의 독일 통일 정책그룹 (Bundeskanzleramt/Arbeitsgruppe zur Deutschen Einheit des Bundesinnenministeriums)
18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	1990년 2월 9일	연방정부 재무차관 쾰러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 - 35014 Ge 33 Band 1
19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	1990년 2월 14일	서독의 경제발전 평가를 위한 경제전문 자문위원회, 자문회의의 위원장 한스 슈나이더, 연방수상 헬무트 콜	Deutscher Bundestag, 11/8472, S. 306-308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0	화폐통합 대신 동독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1990년 2월 17일	브레멘 대학 교수 루돌프 힉켈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21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	1990년 3월 6일	연방 수상청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22	동독 중앙은행 개정법	1990년 3월 6일	동독 국가평의회	DDR-Gesetzblatt 1990 I/16, 125
23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	1990년 3월 9일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동독의 재무장관 발터 지거트, 연방감사원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an die Obersten Bundesbehörden, II A 3 - H 1360/8 - 1/90
24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	1990년 3월 20일	Präsident der Staatsbank der DDR Horst Kaminsky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NN, S. 233-236, Ausgabetag 25.04.1990
25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의 시각	1990년 3월 21일	연방정부 경제부 장관, 수상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26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림 장관의 서한 - 화폐 교환 비율의 사회적 의미	1990년 3월 27일	연방 노동복지부 장관 노베르트 블림(Nobert Blüm), 헬무트 콜 연방 총리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231, S. 979-980.
27	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의 결정	1990년 4월 3일	연방수상실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28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관계	1990년 4월 20일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소련 부총리 시타얀, 소련 외무차관 오브민스키, 키브친스키 소련대사	Bundesarchiv, BArch/BKAmt/212 - 35400 De 39 NA 2 Band 3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9	경제화폐사회통합 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	1990년 4월 27일	서베를린 시정부 시장실 슈뢰더, 수상청장 자이더스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30	동서독 정부가 작성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에 관한 실무문서에 관한 소련의 입장표명 - 동독 정부에게 제시	1990년 4월 28일	소련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31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	1990년 5월 18일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연방은행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연방보험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상호경제원조평의회(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유럽연맹(Europäische Gemeinschaft)	연방법률관보. 1990 II 537쪽, 제 9 항, 1998년 6월 9일에 제정된 법 (BGBl. I S. 1242) (BGBl. 1990 II S.537, Art 9 3 Gesetz vom 09.06.1998 (BGBl. I S. 1242))
32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과 제안	1990년 5월 23일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Vorsitzende Bergmann-Pohl, Ausschuß Deutsche Einheit der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 der DDR, Drucksache 24 a
33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4차 회의 (부록: 동독 기업의 수익성, 도이치마르크로 전환시 기업의 재정상황과 재산의 가치의 평가를 위한 DM개시 대차대조표)	1990년 5월 25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보기쉬, 신탁청 이사회 임원, 크라우제 청장, 최고인민회의 각 당 대표, 동독 경제부 대표, 서독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비서국 대표	Bundesarchiv, BArch/DA 1/17490
34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	1990년 5월 28일	연방 수상청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결과 프로토콜 날짜 없음 (Bundesarchiv: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Undatiertes Ergebnisprotokoll)
35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입장	1990년 6월 16일	동독 외무성, 동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스제프스키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6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 (재산법)	1990년 6월 21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37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 (재산법)	1990년 6월 21일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38	소련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조치	1990년 6월 27일	연방재무부	Bundesarchiv, BArch/BK, 01 (212) - 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9	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연방은행, 동독 내각 각료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9, S. 515-524, Ausgabetag 09.07.1990
40	대외무역과 자본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	1990년 6월 28일	Ministerra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Gesetzblatt der DDR, 41 / 600
41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동독 재무부, 동독 중앙은행,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1-502, Ausgabetag 04.07.1990
42	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Volkskammer der DDR, Präsidium der Volkskammer der DDR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3, Ausgabetag 04.07.1990
43	베를린 국립은행법	1990년 6월 29일	동독인민회의	DDR-Gesetzblatt 38, 504
44	서방국가와 서독의 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의 채무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4일	동독 내각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2, S. 662-664, Ausgabetag 20.07.1990
45	독일 통일 실현 조약 (통일 조약)에 관련 제 1차 협상	1990년 7월 6일	드 메지에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Günther Krause) 정무 차관(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바이에른(Bayern) 주, 함부르크(Hamburg) 시, 바덴-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 베를린(Berlin) 시, 유럽 공동체 위원회(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6	독일 통일 실현 조약 (통일 조약) 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	1990년 7월 9일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 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이에른 주, 함부르크 시, 바덴-뷔템베르크 주, 니더작센 주, 베를린 시, 유럽 공동체 위원회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47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 - 저축금고지침	1990년 7월 26일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5-1279, Ausgabetag 30.08.1990
48	어음에 대한 이증과세 제한에 관한 규정	1990년 7월 31일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9, Ausgabetag 30.08.1990
49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령권을 연방금융감독원에 위임하는 규정	1990년 9월 4일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신용기금 연방관리청, 독일 연방은행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47, S. 1995, Ausgabetag 15.09.1990
50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상에 관한 법 (DM-대차대조법)	1990년 9월 23일	신탁청, 연방법무부, 연방재무부, 연방경제기술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69-1193, Ausgabetag 28.09.1990 (Gesetz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gesetz]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51	화폐통합과정에서 화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	1990년 10월 29일	연방신용관리국, 독일 연방은행,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59, S. 2394-2397, Ausgabetag 03.11.1990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2	독일 경제 1990년-1991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	1991년 1월 1일	Günter Pehl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Deutsche Bundesbank, Bundeskabinett, Regierung der DDR, Vorsitzender des Ministerrats der DDR Hans Modrow, Ministerpräsident der DDR Lothar de Maizière, Bundeskanzler Helmut Kohl, F.D.P.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Jahrgang 52, 1991, Heft 1, S. 26-37, http://library.fes.de/gmh/main/pdf-files/gmh/1991/1991-01-a-026.pdf
53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도입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	1991년 1월 2일	연방회의,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Bundesrat, Drucksache 3/91
54	마르크 도입과 관련한 대차대조법의 개정 발표	1941년 4월 18일	연방법무부 장관 클라우스 킹켈, 신탁청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71-993, Ausgabetag 26.04.1991
55	재산법 개정안	1991년 4월 18일	연방법무부 장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경제장관 헬무트 하우스만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57-970, Ausgabetag 26.04.1991
56	동독 기업의 인수 - 도이치뱅크가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한 사례	1991년 4월 30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Deutscher Bundestag, Fraktion der SPD i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AG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53
57	베를린은행에 의한 베를린국립은행의 인수	1992년 1월 6일	Berliner Bank, Berliner Stadtbank	Der Spiegel, 2/1992, http://magazin.spiegel.de/EpubDelivery/spiegel/pdf/13679257
58	헤센-튀링겐 공동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3월 10일	Land Hess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Hans Eichel; Freistaat Thüring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Bernhard Vogel	HessGVBl. I S. 190, ThürGVBl. S. 291
59	1991년도 연방은행 사업보고서	1992년 4월 2일	Bundesregierung, Bundesländer, Deutsche Bundesbank	Geschäftsbericht der Deutschen Bundesbank für das Jahr 1991, Selbstverlag der Deutschen Bundesbank, Frankfurt am Main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0	동부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12월 17일	Land Brandenburg, Land Mecklenburg-Vorpommern, Freistaat Sachsen, Land Sachsen-Anhalt	https://www.osv-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OSV_Staatsvertrag_Lesefassung-26-05-09.pdf
61	서독을 방문한 동독주민에게 제공된 환영금의 재원과 총액	1993년 3월 9일	연방의회, 연방내무부 차관 바펜슈미트, 연방의회 의원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45, S. 11
62	사회시설의 구매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1993년 6월 3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 (PDS/Linke Liste)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5075
63	구동독채무상환기금법 개정법	1993년 6월 23일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30, S. 984-986, Ausgabetag 26.06.1993 (Artikel 37 des Gesetzes über 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finanziellen Erblast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zur langfristigen Sicherung des Aufbaus in den neuen Ländern, zur Neuordnung des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s und zur Entlast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 / Gesetz zur Umsetzung des Föderalen Konsolidierungsprogramms)
64	동서독 화폐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규정	1993년 8월 24일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kanzler Helmut Kohl,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47, S. 1522-1524, Ausgabetag 04.09.1993
65	화폐 전환 이후 독일의 화폐와 통화	1994년	라인하르트 폴	독일 연방은행, DIW 베를린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6	은행에 의한 신탁청 관리기업의 인수	1995년 1월 20일	Bundesregierung, Treuhandanstalt, Bankenverbände,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in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Irmgard Karwatzki (CDU),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Christa Luft (PDS)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7
67	바이에른 주은행에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의 매각	1995년 3월 28일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 (PDS)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933
68	협동조합의 매각	1995년 10월 13일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l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Gerald Thalheim (SPD)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45
69	신연방주의 구체무 청산에 관한 연방감사원의 입장에 관하여	1995년 11월 10일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r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Wieland Sorge (SPD); Bundesrechnungshof; Deutscher Bundestag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980
70	동독의 구체무 - 연방의회 질의와 응답	1995년 11월 29일	Deutscher Bundestag;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Jürgen Stark; Abgeordnete des Deutschen Bundestages; Bundesrechnungshof;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Deutscher Bundestag - 13. Wahlperiode, 73. Sitzung, Bonn, 29.11.1995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1	통일의 경제적 비용	1996년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동독, 신탁관리청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년. German Unification - 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p. 189-200

문서 번호 1

화폐개혁 이후 가격과 경제정책의 기본지침에 관한 법

1948 년 6 월 24 일

담당자 / 기관: 통합경제영역 경제위원회 위원장 쾰러 (초대 서독 연방의회의장)

내용:

이 문서는 2 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 독일에서 미국점령지역과 영국점령지역에 설치된 공동경제위원회가 1948 년에 도입한 기본지침법이다. 이 법의 도입을 통해 미국과 영국은 이후 서독에서 자유시장경제를 구축할 기본틀을 만들었다. 이 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제위원회의 행정책임자였던 루드비히 에어하르트였다. 에어하르트는 나중에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부 장관 그리고 수상을 역임한 사람이다. 1948 년에 도입된 법은 1 년 간 유효하였고 1949 년에 새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새 법 또한 1 년간 유효하였다.

이 법을 통해 대부분의 물자에 대한 가격규제가 해제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 스스로 가격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고 전후 독일에서 여러 가지 물자가 유통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주식과 주요 자원은 가격규제 해제에서 제외되었다. 독점과 같은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었다.

출처: Gesetz- u. Verordnungsblatt des Wirtschaftsrates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 1948, Nr. 12, S. 59 f.

Gesetz- u. Verordnungsblatt

DES WIRTSCHAFTSRATES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ES

(Amerikanisches und Britisches Besatzungsgebiet in Deutschland)

1948

Ausgegeben in Frankfurt am Main, am 7. Juli 1948

Nr. 12

INHALT:

Gesetz über Leitsätze für die Bewirtschaftung und Preispolitik nach der Geldreform . . .	S. 59
Anordnung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nach der Währungsreform . . .	S. 61
Erste Verordnung zur Sicherung der Währung und der öffentlichen Finanzen . . .	S. 63
Verordnung zur Aenderung der Ersten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Bewirtschaftungsnotgesetz	S. 64
Bekanntmachung der Bank deutscher Länder über Zins- und Diskontsätze	S. 64
Beilage Nr. 3, Gesetz Nr. 60 der Amerikanischen Militärregierung Verordnung Nr. 129 der britischen Militärregierung	

GESETZ

über Leitsätze für die Bewirtschaftung und Preispolitik nach der Geldreform.

Vom 24. Juni 1948.

Aus dem Zusammenbruch der Kriegswirtschaft hat sich ein Zustand ergeben, der die wirtschaftlichen Energien gelähmt, sie in eine dem Gemeinwohl schädliche Richtung gelenkt und zu großen sozialen Ungerechtigkeiten geführt hat. Die Geldreform soll diese unheilvolle Entwicklung überwinden helfen, indem sie die natürliche Beziehung zwischen Leistung und Gegenleistung wiederherstellt, damit den Beziehern von Arbeitseinkommen zum bevorzugten Käufer macht und so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Steigerung der Arbeitsleistung und der Produktion schafft. Indem die Kaufkraft im wesentlichen auf den Betrag der in der laufenden Erzeugung entstehenden Arbeitseinkommen beschränkt wird, wird die bisher durch die großen Geldhorte aufgeblähte Nachfrage auf ihr berechtigtes Ausmaß zurückgeführt. Zugleich wird das Warenangebot durch Auflösung der gehorteten Bestände vergrößert. Die bisherigen inflationistischen Tendenzen werden unterbunden.

Das aus der Vergangenheit stammende, kaum noch wirksame Zwangssystem kann daher, insbesondere unter Berücksichtigung des anlaufenden Marshall-Plans, aufgelockert, der Markt stärker zur Steigerung der Wirtschaftlichkeit in Erzeugung und Verteilung eingesetzt werden. Die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Notwendigkeiten gehen somit Hand in Hand, da eine bessere Versorgung der breiten Massen nicht ohne Anspannung aller produktiven Kräfte, eine vollständige Ausnutzung aller produktiven Kräfte nicht ohne bessere Versorgung der breiten Massen möglich ist. Daraus folgt, daß die Wirtschaftspolitik wirtschaftliche und soziale Gesichtspunkte in gleicher Weise in Betracht zu ziehen hat.

Die Auflockerung des staatlichen Warenverteilungs- und Preisfestsetzungssystems findet ihre Grenze dort, wo es darauf ankommt

1. den Schutz des wirtschaftlich Schwächeren zu gewährleisten,

2. die Durchführung von Wirtschaftsprogrammen im öffentlichen Interesse sicherzustellen,
3. die Ausnutzung einer Mangellage durch monopolistische Einflüsse zu unterbinden.

Um die damit umrissenen Aufgaben zu erfüllen und dadurch zugleich die Grundlage für eine die Stabilität der neuen Währung sichernde Geld- und Kreditpolitik schaffen zu können, bedarf die Wirtschaftsverwaltung in der Uebergangszeit ausreichender Eingriffsmöglichkeiten, die eine schnell und nachdrücklich wirkende Lenkung der vorher nicht übersehbaren wirtschaftlichen Vorgänge im Rahmen der nachfolgenden Leitsätze und zu deren Verwirklichung gestatten.

Der Wirtschaftsrat hat daher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Artikel I

Für die Bewirtschaftung und Preispolitik nach der Geldreform werden die aus der Anlage ersichtlichen Leitsätze, die einen Bestandteil des Gesetzes bilden, aufgestellt.

Artikel II

Der zuständige Direktor wird beauftragt, im Rahmen dieser Leitsätze (Artikel I)

1.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auf dem Gebiet der Bewirtschaftung nach Maßgabe des Bewirtschaftungsnotgesetzes zu treffen,
2. die Waren, Warengattungen, Güter und Leistungen im einzelnen zu bestimmen, die von den Preisvorschriften freigestellt werden sollen, wobei er Preisvorschriften auf Zeit oder Dauer außer Kraft oder wieder in Kraft setzen kann.

Artikel III

Zur Ueberwachung und Beratung des Direktors hinsichtlich der Einhaltung seines Auftrages wird ein Ausschuß aus fünf Mitgliedern des Wirtschaftsrats und drei Mitgliedern des Länderrats gebildet. Der Direktor gibt dem Ausschuß von allen grundsätzlichen Maßnahmen unverzüglich Kenntnis. Der Ausschuß berät den Direktor auf dessen Wunsch vor dem Erlass grundsätzlicher Maßnahmen.

treten der gesetzlichen Regelung der Geldreform in Kraft und am 31. Dezember 1948 außer Kraft.

Das vorstehende Gesetz wird nach Zustimmung des Länderrates hiermit verkündet.

Frankfurt am Main, den 24. Juni 1948.

Artikel IV

Dieses Gesetz tritt zugleich mit dem Inkraft-

Der Präsident des Wirtschaftsrates

Dr. Erich Köhler

Anlage**zum Gesetz über Leitsätze für die Bewirtschaftung und Preispolitik nach der Geldreform.****Leitsätze für die Bewirtschaftung und Preispolitik nach der Geldreform.****I.**

1. Der Freigabe aus der Bewirtschaftung ist vor ihrer Beibehaltung der Vorzug zu geben.
2. Die Hauptnahrungsmittel und die Rohstoffe, die eine wesentliche Grundlage für die gewerbliche und landwirtschaftliche Gütererzeugung bilden, sind zur Erzielung eines planmäßigen Einsatzes dieser Güter weiterhin zu bewirtschaften.
3. Die Freigabe von Getreide und Getreideerzeugnissen, Milch und Milcherzeugnissen, Kartoffeln, Fleisch und Fett, von Kohle, Eisen und Stahl aus der Bewirtschaftung bedarf in jedem Falle der vorherigen Genehmigung durch den Wirtschaftsrat.
4. Textilwaren, die der Bekleidung dienen, Schuhe und Seifen können als für den unmittelbaren menschlichen Bedarf lebensnotwendig einer Verbrauchsregelung unterworfen bleiben.
5. Wenn und insoweit eine Bewirtschaftung von Rohstoffen, Halb- und Fertigerzeugniss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unterbleibt, kann durch Lieferanweisungen, durch Herstellungsgebote und -verbote eine für die gesamte Volkswirtschaft und insbesondere für den Bedarf der Bevölkerung notwendige Fertigung und Auslieferung sichergestellt werden.
6. Die Einschaltung des Behördenapparates bei der Durchführung der Bewirtschaftung ist auf ein Mindestmaß einzuschränken. An die Stelle des Bezugscheinsystems mit individueller Bedürfnisprüfung tritt die allgemeine Bezugskarte (Punktkarte), die je nach der Vorratslage durch allgemeine Aufrufe zum Bezuge der bewirtschafteten Güter berechtigt. Die allgemeine Bezugskarte ist durch Sonderbezugskarten für besonders notleidende Bevölkerungskreise (z. B. Flüchtlinge, Ausgebombte) und für die Ausstattung bestimmter Berufsgruppen (z. B. mit Arbeitskleidung und Arbeitsschuhen) zu ergänzen. Die Uebertragung von Kontingenten kann zugelassen werden.

gewerbliche und landwirtschaftliche Gütererzeugung bilden, sowie die Mieten und Verkehrstarife sind behördlich festzusetzen.

3. Die Festsetzung und die Freigabe der Preise für Getreide und Getreideerzeugnisse, Milch und Milcherzeugnisse, Kartoffeln, Fleisch und Fett, für Kohle, Eisen, Stahl, Gas und Elektrizität bedarf der vorherigen Genehmigung durch den Wirtschaftsrat.
4. Wo Preise behördlich gebunden werden, sind sie als Höchstpreise festzusetzen. Die Höchstpreise müssen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zu den Kosten eines wirtschaftlich geführten Betriebes stehen. Auf einen möglichst niedrigen Endpreis der Fertigerzeugnisse ist Bedacht zu nehmen.
5. Alle Preise — auch die freigegebenen — sind behördlich zu überwachen. Wer Höchstpreise überschreitet oder wirtschaftliche Ueberlegenheit oder ein im Verhältnis zur Nachfrage geringes Angebot mißbraucht oder wer Waren zurückhält in der Absicht, die Preise zu steigern, ist streng zu bestrafen. Insoweit gesetzliche Grundlagen hierfür nicht vorhanden sind, sind dem Wirtschaftsrat unverzüglich die erforderlichen Gesetze vorzulegen.

III.

Soweit der Staat den Verkehr mit Waren und Leistungen nicht regelt, ist dem Grundsatz des Leistungswettbewerbs Geltung zu verschaffen. Bilden sich wirtschaftliche Monopole, so sind sie zu beseitigen und bis dahin staatlicher Aufsicht zu unterstellen. Der Entwurf eines dahingehenden deutschen Gesetzes ist dem Wirtschaftsrat alsbald vorzulegen.

IV.

Der Kreditpolitik ist von der Verwaltung für Wirtschaft im engen Einvernehmen mit den sonst dafür verantwortlichen Stellen besondere Aufmerksamkeit zu schenken.

V.

Es ist darauf hinzuwirken, daß mit der Lockerung der Bewirtschaftung und der Preisbildung eine entsprechende Lockerung der Lohnbildung verbunden wird.

II.

1. Der Freigabe der Preise ist vor der behördlichen Festsetzung der Vorzug zu geben.
2. Die Preise für die Hauptnahrungsmittel und die Rohstoffe, die eine wesentliche Grundlage für die

문서 번호 2

서독과 동독 간의 통상협정 (베를린 협정)

1951 년 9 월 26 일

담당자 / 기관: 독일 은행, 동독 정부 내독교역 무역과 물자조달성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협정으로 불리는 동독과 서독 간의 물자교류에 관한 협약문이다. 이 협정을 통해 서방연합군이 점령했던 지역과 소련군이 점령했던 지역에 건입된 서독과 동독 간의 교역이 시간적 제한없이 허용되었다.

그 당시 서독과 동독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의 문안은 독일연방주의 은행이 발행하는 도이치마르크가 사용되는 지역과 독일조폐은행이 발행하는 도이치마르크가 통용되는 지역으로 명칭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서로 교역할 물자, 서비스와 그 가치와 그것을 정산하는 단위 (서독과 동독의 화폐를 1:1 의 비율로 교환), 그리고 정산하는 방법 (각 지역의 은행에 설치된 계좌에 지불) 등이 규정되었다. 이 계좌는 이자가 지불되지 않았고 서로 합의된 규모 내에서 적자를 내는 것도 허용되었다 (신용한도, 총서 문서 3 참조). 1951 년 베를린 협정이 체결될 당시 적자 허용한도는 삼천만 마르크였다.

서독이 동독으로 수출한 물자는 주로 철강제품과 기계, 비료 그리고 생선이었고 동독은 주로 설탕과 사료와 같은 농산품, 석탄과 정유제품을 수출하였다.

출처: Bundesanzeiger, 1951, Nr. 186, S. 3 ff

Abkommen

über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Berliner Abkommen).

Über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wird das folgende Abkommen geschlossen:

A. Warenverkehr

Artikel I

- Die zuständigen Behörden in den Währungsgebieten der DM-West und in den Währungsgebieten der DM-Ost werden Bezug und Lieferung der in den Anlagen 1, 2, 3 und 4 aufgeführten Waren bis zu den darin angegebenen Werten durch Erteilung von Zahlungsgenehmigungen und Warenbegleitscheinen genehmigen. Die Wertgrenzen dieses Abkommens schließen die Wertgrenzen der Vereinbarung vom 3. Februar 1951 über den Vorgriff auf ein noch abzuschließendes Abkommen ein. Die zuständigen Behörden werden ferner die Verbringung von Gütern auf Grund von genehmigten Lohnveredlungs-, Reparatur- und Mietverträgen zulassen.
- Die Warenlisten gemäß den Anlagen 1, 2, 3 und 4 können im beiderseitigen Einvernehmen geändert oder erweitert werden.
- Es besteht Übereinstimmung darüber, daß von Lieferungen und Bezügen ein angemessener Teil auf die Wirtschaft Berlins entfallen wird.

Artikel II

- Die Lieferungen erfolgen auf Grund von zwischen den Geschäftspartnern zu vereinbarenden Verträgen unter Beachtung der behördlichen Bestimmungen. Gegenseitigkeits- und Kompensationsgeschäfte sind nicht gestattet, Ausnahmen bedürfen der beiderseitigen Zustimmung.
- Die zuständigen Behörden können die Genehmigung von Lieferung oder Bezug versagen, wenn die zwischen den Geschäftspartnern getroffenen Preisvereinbarungen den Interessen ihrer Währungsgebiete widersprechen.
- Für Lieferung und Bezug von Kohle gilt das Übereinkommen vom 22. Dezember 1950 (Anlage 5).

B. Dienstleistungsverkehr

Artikel III

Dienstleistungen sind zugelassen. Im einzelnen gilt die Vereinbarung vom 3. Februar 1951 über die zahlungsmäßige Abwicklung von Dienstleistungen (Anlage 6).

C. Zahlungsverkehr

Artikel IV

Zahlungen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DM-Ost, die sich aus der Durchführung dieses Abkommens ergeben, werden ausschließlich im Verrechnungswege über die Bank deutscher Länder einerseits und die Deutsche Notenbank andererseits abgewickelt.

Artikel V

1. Alle Zahlungen für Leistung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an die Währungsgebiete der DM-Ost gemäß Artikel IV sind an die Deutsche Notenbank zu entrichten; der entsprechende Betrag wird von der Deutschen Notenbank einem auf den Namen der Bank deutscher Länder zu errichtenden Verrechnungskonto in Verrechnungseinheiten gutgeschrieben.

Alle Zahlungen für Leistung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an die Währungsgebiete der DM-West gemäß Artikel IV sind an die Bank deutscher Länder zu entrichten; der entsprechende Betrag wird von der Bank deutscher Länder einem auf den Namen der Deutschen Notenbank zu errichtenden Verrechnungskonto in Verrechnungseinheiten gutgeschrieben.

rechtigt, weitere Lastschriften auf diesen Unterkonten auszusetzen.

- Wenn auf den Unterkonten „2“ und „3“ der Deutschen Notenbank bei der Bank deutscher Länder zusammengekommen ein Debitsaldo von 20 Millionen Verrechnungseinheiten erreicht wird, ist die Bank deutscher Länder berechtigt, weitere Lastschriften auf diesen Unterkonten auszusetzen.

Artikel X

Für die technischen Einzelheiten der Kontenführung und Zahlungsabwicklung gilt die Vereinbarung zwischen der Bank deutscher Länder und der Deutschen Notenbank gemäß Anlage 7 dieses Abkommens.

D. Sonstige Bestimmungen

Artikel XI

Lieferungen und Bezüge von Energie (Gas, Wasser, Elektrizität) sind zugelassen. Im übrigen gilt die Vereinbarung über die zahlungsmäßige Abwicklung von Energielieferungen und damit zusammenhängenden Dienstleistungen (Anlage 8).

Artikel XII

Die zuständigen Behörden in den Währungsgebieten der DM-West und der DM-Ost werden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n Bestimmungen dieses Abkommens nicht entspricht, unterbinden.

Artikel XIII

Die mit der Überwachung des Abkommens beauftragten Stellen werden sich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über den Stand des Abkommens unterrichten und die zu seiner Durchführung notwendigen Absprachen treffen. Im übrigen gilt die Vereinbarung über Verfahrensfragen (Anlage 9).

E. Schlußbestimmungen

Artikel XIV

Das Abkommen tritt am 3. Juli 1951 in Kraft.

Artikel XV

Die Überleitungsbestimmungen sind in der Überleitungsvereinbarung enthalten (Anlage 10).

Artikel XVI

Das Abkommen kann bis zum 31. März 1952 zum 30. Juni 1952, danach mit dreimonatiger Kündigungsfrist zum Vierteljahresschluß gekündigt werden.

Artikel XVII

- Genehmigte, aber bei Ablauf des Abkommens nicht erledigte Geschäfte, werden nach den Bestimmungen dieses Abkommens abgewickelt.
- Nach Abwicklung der in Ziffer 1 genannten Geschäfte sind die auf den Unterkonten verbleibenden Salden festzustellen. Diese sind danach innerhalb von drei Monaten durch Leistungen abzudecken, die den über die einzelnen Unterkonten zu verrechnenden Warenarten entsprechen.

Artikel XVIII

Wesentlicher Bestandteil dieses Abkommens sind:

- Das Übereinkommen vom 22. Dezember 1950 über Lieferung und Bezug von Kohle (Anlage 5).
- Die Vereinbarung vom 3. Februar 1951 über die zahlungsmäßige Abwicklung von Dienstleistungen (Anlage 6).
- Die Vereinbarung zwischen der Bank deutscher Länder und der Deutschen Notenbank (Anlage 7).
- Die Vereinbarung über die zahlungsmäßige Abwicklung von Energielieferungen und damit zusammenhängenden Dienstleistungen (Anlage 8).
- Die Vereinbarung über Verfahrensfragen (Anlage 9).
- Die Überleitungsvereinbarung (Anlage 10).

Berlin, den 20. September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M-West)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gez. Dr. Kaumann

gez. Orlopp

Anlage 1

(zu Artikel I des Berliner Abkommens vom 20. Sept. 1951)

C. Erzeugnis

- Ruhrkohle, übereinkommenber 1950
- Sonstige Erzeugnisse (Spezifikation)

D. Mineralöl

- Roheisen
- Walzwerke
- Erzeugnisse Hammer- u
- Erzeugnisse Kaltwalzwerke

E. Eisen und

F. Gießereie

G. NE-Metall

H. Energie-L

Anlage 3
(zu Artikel I des Abkommens vom

Lieferungen
(in Abhängi

A. Landwirts

- Sonstige landwirtsch. Erzeugnisse (Spezifikation)

B. Forstwirts

- Sonstige forstwirtschaftliche Erzeugnisse (Spezifikation)

C. Steine und

- Erzeugnisse Fahrzeugbau (Spezifikation)

D. Erzeugnis

- Büromaschinen (Spezifikation)

E. Büromasch

- Elektrotechnik (Spezifikation)

F. Elektrotec

- Feinmechanik (Spezifikation)

G. Feinmecha

- Eisen-, Stahlwaren (Spezifikation)

H. Eisen-, Sta

- Kurzwaren Sportgeräten (Spezifikation)

J. Kurzwaren

- Chemische Erzeugnisse (Spezifikation)

K. Chemische

- Gummiwaren (Spezifikation)

L. Gummierze

- Zellstoff, Papier (Spezifikation)

M. Zellstoff, P

- Druckereierzeugnisse (Spezifikation)

N. Druckererz

- Erzeugnisse Steingüter (Spezifikation)

O. Erzeugnis

- Textilrohstoffe (Spezifikation)

P. Textilroh

- Verschiedene Vereinbarungen (Spezifikation)

V. Verschiede

Anlage 4
(zu Artikel I des Abkommens vom 20. Sept. 1951)

Artikel VII

In den Artikeln V und VI genannten Konten werden in ein Unterkonto „1“ und ein Unterkonto „2“ unterteilt. Außer den Unterkonten „1“ und „2“ werden gemäß der Vereinbarung vom 3. Februar 1951 über die zahlungsmäßige Abwicklung von Dienstleistungen je ein Unterkonto Dienstleistungen „3“ und gemäß Übereinkommen vom 22. Dezember 1950 je ein Unterkonto Kohle „4“ geführt. Über die Unterkonten „1“ sind alle Zahlungen gemäß Artikel IV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einerseits und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andererseits für Leistungen aus den Anlagen 1 und 2 zu diesem Abkommen zu leisten, und zwar bis zur Höhe der sich aus diesen Anlagen ergebenden Beträge. Über die Unterkonten „2“ sind alle Zahlungen gemäß Artikel IV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einerseits und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andererseits für Leistungen aus den Anlagen 3 und 4 zu diesem Abkommen zu leisten, und zwar bis zur Höhe der sich aus diesen Anlagen ergebenden Beträge. Über die Unterkonten „3“ sind alle Zahlungen gemäß Artikel IV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einerseits und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andererseits für Leistungen aus der Vereinbarung vom 3. Februar 1951 über die zahlungsmäßige Abwicklung von Dienstleistungen zu leisten. Über die Unterkonten „4“ sind alle Zahlungen gemäß Artikel IV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einerseits und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andererseits für Leistungen aus dem Übereinkommen vom 22. Dezember 1950, und zwar bis zur Höhe der sich aus diesem Übereinkommen ergebenden Beträge, zu leisten.

Artikel VIII

Wenn auf den Unterkonten „1“ und „4“ der Bank deutscher Länder bei der Deutschen Notenbank zusammengenommen ein Debitsaldo von 10 Millionen Verrechnungseinheiten erreicht wird, ist die Deutsche Notenbank berechtigt, weitere Anschriften auf diesen Unterkonten auszusetzen. Wenn auf den Unterkonten „2“ und „3“ der Bank deutscher Länder bei der Deutschen Notenbank zusammengenommen ein Debitsaldo von 20 Millionen Verrechnungseinheiten erreicht wird, ist die Deutsche Notenbank berechtigt, weitere Anschriften auf diesen Unterkonten auszusetzen.

Artikel IX

Wenn auf den Unterkonten „1“ und „4“ der Deutschen Notenbank bei der Bank deutscher Länder zusammengenommen ein Debitsaldo von 10 Millionen Verrechnungseinheiten erreicht wird, ist die Bank deutscher Länder be-

Anlage 1

(zu Artikel I des Berliner Abkommens vom 20. Sept. 1951)

Lieferung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in Abhängigkeit von Lieferungen gemäß Anlage 2)

	VE	VE
A. Landwirtschaftliche Erzeugnisse		
1. Zucker	20 000 000.—	
2. Brotgetreide	6 500 000.—	
3. Futtergetreide und eiweißhaltige Kraftfuttermittel	17 000 000.—	
4. Pflanzliche Fette	5 500 000.—	
5. Schweineborsten	4 500 000.—	53 500 000.—
B. Forstwirtschaftliche Erzeugnisse		
1. Grubenholz	7 500 000.—	
2. Nadelstamm- und Schnittholz	4 500 000.—	12 000 000.—
C. Erzeugnisse des Bergbaues		
1. Braunkohlenbriketts laut Kohleübereinkommen vom 22. Dezember 1950		PM
2. Sonstige Erzeugnisse des Bergbaues (Spezifikation vorbehalten)		5 000 000.—
D. Mineralölzeugnisse		
1. Dieselmotorkraftstoff	12 000 000.—	
2. Vergaserkraftstoff	8 000 000.—	
3. Sonstige Mineralölzeugnisse (Spezifikation vorbehalten)	8 000 000.—	28 000 000.—
E. NE-Metalle (Spezifikation vorbehalten)		2 500 000.—
F. Gummierzeugnisse (Spezifikation vorbehalten)		1 000 000.—
G. Energie-Lieferungen		PM
		<u>102 000 000.—</u>

Anlage 2

(zu Artikel I des Berliner Abkommens vom 20. Sept. 1951)

Lieferung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in Abhängigkeit von Lieferungen gemäß Anlage 1)

	VE	VE
A. Landwirtschaftliche Erzeugnisse		
1. Hopfen		10 000 000.—
B. Forstwirtschaftliche Erzeugnisse		
1. Eichenschnittholz		3 000 000.—

	VE	VE
C. Erzeugnisse des Bergbaues		
1. Ruhrkohle und Koks laut Kohleübereinkommen vom 22. Dezember 1950		PM
2. Sonstige Erzeugnisse des Bergbaues (Spezifikation vorbehalten)		1 500 000.—
D. Mineralölzeugnisse (Spezifikation vorbehalten)		1 000 000.—
E. Eisen und Stahl (Spezifikation vorbehalten)		
1. Roheisen	7 500 000.—	
2. Walzwerkserzeugnisse	50 000 000.—	
3. Erzeugnisse der Schmiede-, Hammer- und Preßwerke	5 000 000.—	
4. Erzeugnisse der Ziehereien und Kaltwalzwerke	13 000 000.—	75 500 000.—
F. Gießereierzeugnisse (Spezifikation vorbehalten)		8 500 000.—
G. NE-Metalle (Spezifikation vorbehalten)		2 500 000.—
H. Energie-Lieferungen		PM
		<u>102 000 000.—</u>

Anlage 3

(zu Artikel I des Berliner Abkommens vom 20. Sept. 1951)

Lieferung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in Abhängigkeit von Lieferungen gemäß Anlage 4)

	VE
A. Landwirtschaftliche Erzeugnisse	
1. Sonstige landwirtschaftliche Erzeugnisse (Spezifikation vorbehalten)	40 000 000.—
B. Forstwirtschaftliche Erzeugnisse	
1. Sonstige forstwirtschaftliche Erzeugnisse (Spezifikation vorbehalten)	3 000 000.—
C. Steine und Erden (Spezifikation vorbehalten)	10 000 000.—
D. Erzeugnisse des Maschinen- und Fahrzeugbaues (Spezifikation vorbehalten)	32 000 000.—
E. Büromaschinen (Spezifikation vorbehalten)	9 000 000.—
F. Elektrotechnische Erzeugnisse (Spezifikation vorbehalten)	8 000 000.—
G. Feinmechanik und Optik (Spezifikation vorbehalten)	7 000 000.—
H. Eisen-, Stahl-, Blech- und Metallwaren (Spezifikation vorbehalten)	8 500 000.—
J. Kurzwaren, Musikinstrumente, Sportgeräte, Spielwaren, Schmuckwaren (Spezifikation vorbehalten)	7 500 000.—
K. Chemische Grundstoffe, Halbfabrikate und Fertigerzeugnisse einschließlich Lohnveredelung (Spezifikation vorbehalten)	60 000 000.—
L. Gummierzeugnisse (Spezifikation vorbehalten)	1 500 000.—
M. Zellstoff, Papier und Papierwaren (Spezifikation vorbehalten)	10 000 000.—
N. Druckerzeugnisse und Herstellungskosten von Druckerzeugnissen (Spezifikation vorbehalten)	4 500 000.—
O. Erzeugnisse der Glas-, Porzellan-, Steingut- u. keramischen Industrie (Spezifikation vorbehalten)	19 000 000.—
P. Textilrohstoffe und Textilerzeugnisse einschließlich Lohnveredelung (Spezifikation vorbehalten)	110 000 000.—
	<u>330 000 000.—</u>

2
zu Hauptteil
C. Zahlungs-
verkehr

4
Anlage 6
(zu Artikel III des Berliner
Abkommens vom 20. Sept. 1951)

Abschrift

Berlin, den 27. 1. 1951

**Vereinbarung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M-West) und denen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über die zahlungs-
mäßige Abwicklung von Dienstleistungen.**

Artikel I

Vergütungen für Dienstleistunge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Lieferung oder dem Bezug einer Ware stehen und besonders genehmigt sind, werden über das Unterkonto „Dienstleistungen“ verrechnet.

Artikel II

Vergütungen für andere Dienstleistungen sind, soweit nachstehend aufgeführt, auf Grund von Zahlungsgenehmigungen über das Unterkonto „Dienstleistungen“ zu verrechnen.

1. Kosten, die in Zusammenhang mit der Beförderung von Gütern auf dem Schienen-, Straßen-, Wasser- oder Luftwege zu Lasten eines Verpflichteten mit Sitz oder Ort der Niederlassung im anderen Währungsgebiet entstehen, insbesondere
 - a) Frachtkosten einschließlich der Mieten und Nebenkosten, Standgelder, Charterkosten, Schleplöhne, Liegegelder, Ableichterungskosten;
 - b) Speditionskosten einschließlich der Rollgelder, Kontrollkosten;
 - c) Hafenkosten, Umschlags- und Lagerungskosten;
 - d) Betriebskosten, Schiffsabgaben und Brückengelder;
 - e) Kosten der Zollabfertigung, Transportversicherungsprämien;
 - f) Havarie- und Bergungskosten, Kosten von Notausbesserung;

- g) Provisionen, Agenturkosten, Kosten von sozialen Leistungen.
2. Zahlung von Salden aus der Verrechnung der Verkehrseinnahmen und Betriebskosten der Verkehrsträger mit Ausnahme der in Artikel III geregelten Zahlungen der Eisenbahnverwaltungen.
3. Folgende Vergütungen, soweit die ihnen zugrunde liegenden Leistungen mit Handel oder Verkehr im Zusammenhang stehen:
 - a) Bankspesen, Bankprovisionen und Bankzinsen;
 - b) Kosten von Ausbesserung ohne Warenbewegung, Montagetagekosten;
 - c) Gerichtskosten, Rechtsanwalts- und Notargebühren, Kosten der Rechtshilfe und Urkundenbeschaffung;
 - d) Vergütungen an Sachverständige und Techniker;
 - e) Werbungskosten, Kosten von Auskünften und Informationen;
 - f) Messe- und Ausstellungskosten;
 - g) Vergütungen für die Benutzung beweglicher Gegenstände.
4. Vergütungen an Vertreter, Makler und Agenten im Warenverkehr.
5. Schadensersatzzahlungen auf Grund gesetzlicher oder vertraglicher Haftung, soweit sie mit Handel oder Verkehr im Zusammenhang stehen.
6. Lizenzzahlungen, Patentgebühren.
7. Vergütungen für Schlachtungen.

Zahlungsgenehmigungen für die genannten Dienstleistungen sind auf Antrag des Zahlungsverpflichteten zu erteilen. Die Zahlungsgenehmigung muß vor Inanspruchnahme der Dienstleistung erteilt worden sein. Soweit dies nach dem Charakter der Dienstleistung ausgeschlossen ist, ist die Zahlungsgenehmigung nachträglich zu erteilen. Zahlungsgenehmigungen sind möglichst als Sammelgenehmigungen zu erteilen.

Artikel III

Die Abrechnung zwischen den beiden Eisenbahnverwaltungen erfolgt gemäß einer Sondervereinbarung dieser Verwaltungen, die Bestandteile dieses Abkommens ist.

Artikel IV

Eine im beiderseitigen Einvernehmen erfolgende Erweiterung des Verzeichnisses aus Artikel II, die Voraussetzung für die Zulassung weiterer Dienstleistungsvergütungen zum Verrechnungsverkehr ist, bleibt vorbehalten.

Artikel V

Einzahlungen auf das Unterkonto „Dienstleistungen“ dürfen von den Geldinstituten nur angenommen und an die Verrechnungsbank überwiesen werden, wenn ihnen eine Zahlungsgenehmigung nachgewiesen wird. Jede Verrechnungsbank ist verpflichtet, bei ordnungsgemäßen Einzahlungen die andere Verrechnungsbank unverzüglich mit der Auszahlung des entsprechenden Betrages zu beauftragen. Jede Vertragspartei ist berechtigt, die Auszahlung derartiger von der Gegenseite eingezahlter Dienstleistungsvergütungen an den Forderungsberechtigten von dem Nachweis der Dienstleistungen abhängig zu machen.

Artikel VI

Soweit Verrechnungseinheiten für die beiderseitig erteilten Zahlungsgenehmigun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Swings, wenn ein solcher vereinbart wird, auf dem Unterkonto „Dienstleistungen“ nicht zur Verfügung stehen, sind sie aus dem Unterkonto V b zu übertragen.

Artikel VII

Im übrigen finden auf Vergütungen für Dienstleistungen, die nach dieser Vereinbarung über das Unterkonto „Dienstleistungen“ abgewickelt werden, die Abreden in den Abkommen über den Warenverkehr zwischen den beiden Währungsgebieten Anwendung.

Artikel VIII

Die vorliegende Vereinbarung findet Anwendung bei der Abwicklung des Abkommens über den Interzonenhandel 1949/1950 (Frankfurter Abkommen) und wird wesentlicher Bestandteil eines noch abzuschließenden neuen Abkommens.

Artikel IX

Diese Vereinbarung tritt am Tage der Unterzeichnung in Kraft.

Berlin, den 3. Februar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M-West)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gez. Dr. Kaumann	gez. Georgino (Staatssekretär)

Die Übereinstimmung dieser Abschrift mit der Urschrift wird hiermit bezeugt.

Berlin, den 5. Juli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M-West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M-Ost
gez. Rintelen	gez. Grabit

Vereinbarung
zwischen der Bank deutscher Länder und der
Deutschen Notenbank zum Abkommen über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vom 20. September 1951.

Für die technischen Einzelheiten der Kontenführung und Zahlungsabwicklung gilt nachstehende Vereinbarung:

A. Allgemeines.

1. Die Bank deutscher Länder und die Deutsche Notenbank werden nachstehend als Verrechnungsbank bezeichnet.
2. Jede Verrechnungsbank errichtet für die andere Verrechnungsbank ein Verrechnungskonto, das auf jeder Seite in ein Unterkonto „1“, ein Unterkonto „2“ und die bereits bestehenden Unterkonten Dienstleistungen „3“ und Kohle „4“ unterteilt wird. Die Konten werden zins- und gebührenfrei geführt.
3. Die für die weitere Zahlungsabwicklung von der zuständigen Verrechnungsbank zugelassenen Kreditinstitute werden nachstehend als Abwicklungsbank bezeichnet.

B. Überweisungsverkehr.

1. Einzahlungen auf die Verrechnungskonten nimmt jede Verrechnungsbank über die Abwicklungsbank des Zahlungsschuldners entgegen.
2. Bevor der Zahlungsschuldner die Einzahlung bewirkt, hat er seiner Abwicklungsbank nachzuweisen, daß
 - a) bei Warenlieferungen Lieferung und Zahlung,
 - b) bei Dienstleistungen die Zahlung genehmigt sind.
3. Der zur Weiterleitung der Zahlungen an die Verrechnungsbank bestimmte Vordruck muß neben den banküblichen Vermerken folgendes enthalten:
 - a) die Angabe, auf welchem Unterkonto („1“, „2“, „3“ oder „4“) die Zahlung zu verbuchen ist,
 - b) die Erklärung der Abwicklungsbank des Einzahlers, daß ihr der Nachweis gemäß Ziffer 2 erbracht ist,
 - c) die Nummer der Zahlungsgenehmigung, bei Warenlieferungen außerdem die Nummer der Liefergenehmigung bzw. des Warenbegleitscheins. Betrifft eine Überweisung mehrere Zahlungsgenehmigungen, so ist der Betrag nach den einzelnen Zahlungsgenehmigungen aufzuschlüsseln.

Mittwoch, den 26. September 1951

Die vorstehenden Angaben sind auch bei telegraphischen Überweisungen erforderlich.

4. Die Verrechnungsbank schreibt den eingegangenen Betrag der anderen Verrechnungsbank gut und übersendet ihr als Gutschriftsaufgabe den Überweisungsvordruck in dreifacher Ausfertigung.
5. Die die Gutschriftsaufgabe empfangende Verrechnungsbank belastet die andere Verrechnungsbank auf dem entsprechenden Unterkonto („1“, „2“, „3“ oder „4“) und überweist dem Zahlungsbegünstigten den ihm zustehenden Betrag an seine Abwicklungsbank.

C. Akkreditivstellung.

1. Stellung von Akkreditiven ist nur bei sofortiger Einzahlung des Deckungsbetrages möglich.
2. Die Abwicklungsbank des Akkreditivstellers eröffnet das Akkreditiv bei der Abwicklungsbank des Lieferanten und überweist den Deckungsbetrag an ihre Verrechnungsbank zur Gutschrift auf das in Betracht kommende Unterkonto.
3. Für die Einzahlung und Weiterleitung des Deckungsbetrages gelten die Vorschriften gemäß Abschnitt B. Dem Überweisungsvordruck sind zwei Abschriften des Akkreditivöffnungsschreibens beizufügen. Eine Abschrift leitet die Verrechnungsbank mit dem Überweisungsvordruck an die andere Verrechnungsbank weiter.

D. Schlußbemerkung.

Jede Verrechnungsbank wird der anderen Verrechnungsbank täglich den Stand der Unterkonten mitteilen.

Frankfurt (Main), den 1951. Berlin, den 10. Juli 1951.

Bank deutscher Länder
gez. Vocke
gez. Könneker

Deutsche Notenbank
gez. Kuckhoff
gez. Todtmann

Vereinbarung
über die zahlungsmäßige Abwicklung von
Energielieferungen und damit zusammenhängenden
Dienstleistungen.

- I. Nach Maßgabe des Abschnitts C des Abkommens über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sind auch folgende Vergütungen zu verrechnen:
 1. Für Lieferungen von Energie (Elektrizität, Gas, Wasser), soweit diese nicht gemäß den zwischen den Geschäftspartnern abgeschlossenen Verträgen unmittelbar verrechnet werden, über die Unterkonten „1“.
 2. Für Dienstleistungen, die im Zusammenhang mit Energielieferungen stehen, soweit diese nicht gemäß den zwischen den Geschäftspartnern abgeschlossenen Verträgen unmittelbar verrechnet werden, über die Unterkonten „3“.
 3. Für Energielieferungen, die vor Inkrafttreten des Abkommens ausgeführt worden sind, und damit zusammenhängende Dienstleistungen, über die entsprechenden Unterkonten „1“ oder „3“.
- II. Das Übereinkommen zwischen den obersten Wirtschaftsorganen der Währungsgebiete DM-Ost und DM-West — betreffend Stromlieferungen — vom 14. November 1950 ist wesentlicher Bestandteil dieser Vereinbarung (Anlage).

Berlin, den 20. Sept.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M-West) gez. Dr. Kaumann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gez. Orlopp

Anlage
zu Anlage 8

Abschrift

Übereinkommen
zwischen den obersten Wirtschaftsorgan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und der DM-West.

Die zwischen

1. Berliner Kraft- und Licht (BEWAG) -AG., Berlin W 35, Bendlerstr. 26, und dem Energie-Bezirk-Nord, Vereinigung Volkseigener Betriebe (Z), Berlin W 8, Friedrichstr. 194/199,
 2. Berliner Kraft- und Licht (BEWAG) -AG., Berlin W 35, Bendlerstr. 26, und Berliner Kraft- und Licht (BEWAG) -AG., Berlin NW 7, Luisenstr. 35,
- abgeschlossenen Vereinbarungen vom 10. bzw. 9. 11. 1950, betreffend Stromlieferungen, werden als wesentlicher Bestandteil des Abkommens über den Interzonenhandel 1949/50 (Frankfurter Abkommen) und sodann eines noch abzuschließenden Übereinkommens über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M-Ost und der DM-West 1951 anerkannt.

Berlin, den 14. November 1950.

Für die obersten Wirtschaftsorgane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gez. Orlopp
Für die obersten Wirtschaftsorgane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gez. Dr. Kaumann

Die Übereinstimmung dieser Abschrift mit der Urschrift wird hiermit beglaubigt:

Berlin, den 5. Juli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M-West gez. Rintelen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M-Ost gez. Grabit

Vereinbarung zum Verfahren.

- I. Zwecks monatlicher Abstimmung über den Stand des Abkommens und über die Ausnutzung der vertraglich festgelegten Wertgrenzen wird vereinbart:
1. Der laufende Austausch von Durchschriften aller erteilten Zahlungsgenehmigungen.
 2. Die laufende Unterrichtung darüber, in welchen Fällen und aus welchen Gründen für Zahlungsgenehmigungen Warenbegleitscheine oder Liefergenehmigungen nicht oder nur teilweise erteilt wurden.
 3. Eine Abstimmung über die tatsächlichen Lieferungen und Bezüge einschließlich Dienstleistungen jeweils jeden 2. Monat zwischen dem 20. und 25. für die vorhergehenden Monate.

- II. Bei der Ausfüllung der Warenbegleitscheine sind folgende Richtlinien zu beachten:
- Der genehmigte Warenbegleitschein stellt die Genehmigung zur Verbringung von Waren aus den Währungsgebieten der DM-Ost in die Währungsgebiete der DM-West und umgekehrt, sowie aus Westdeutschland nach Westberlin und umgekehrt dar. Die handelsüblichen Begleitpapiere (z. B. Frachtbrief, Konnossement, Ladeschein usw.) ersetzen den Warenbegleitschein nicht.
1. Alle Eintragungen im Warenbegleitschein sind mit Schreibmaschine zu vollziehen, mit Ausnahme der Eintragungen in den Spalten 13 bis 18. Freibleibender Raum ist zu entwerfen. Handschriftlich vorgenommene Verbesserungen, Streichungen, Rasuren und Nachträge machen den Warenbegleitschein ungültig. Maschinenschriftliche Änderungen müssen von der genehmigenden Behörde

Mittwoch, den 26. September 1951

- Änderungen in Spalte 18 von einer siegelführenden Behörde bestätigt sein.
2. In Spalte 1 des Warenbegleitscheines ist das Land (bei Berlin auch der Sektor) anzugeben, in dem der Lieferer (Verkäufer) seinen Wohn- oder Geschäftssitz hat. Die Anschrift des Lieferers ist vollständig, d. h. mit Straße und Hausnummer einzusetzen, falls vorhanden, auch die Telefonnummer; wenn nicht vorhanden, ist „kein Anschluß“ einzusetzen. Die Anschrift des Lieferers kann auch mit Gummistempel eingesetzt werden.
 3. In Spalte 2 des Warenbegleitscheines ist das Land (bei Berlin auch der Sektor) anzugeben, in dem der Bezieher (Käufer) seinen Wohn- und Geschäftssitz hat. Die Anschrift des Beziehers ist vollständig, d. h. mit Straße und Hausnummer einzusetzen, falls vorhanden, auch die Telefonnummer; wenn nicht vorhanden, ist „kein Anschluß“ einzusetzen. Die Anschrift des Beziehers kann auch mit Gummistempel eingesetzt werden.
 4. Sofern mehrere Waren auf einem Vordruck aufgeführt werden, ist jede einzelne Warenart in Spalte 3 mit laufender Nummer zu versehen.
 5. In Spalte 4 ist die Menge, in Spalte 5 die handelsübliche Mengeneinheit einzutragen.
Antragsteller in den Währungsgebieten der DM-Ost setzen außerdem die Mengeneinheit der Schlüsseliste in Spalte 5 ein, falls die Schlüsseliste zum Produktionsplan 1951 eine andere Mengeneinheit als die handelsübliche aufweist.
 6. In Spalte 6 ist die handelsübliche Bezeichnung der zu versendenden Waren anzugeben. Sammelbezeichnungen sind unzulässig. Antragsteller in den Währungsgebieten der DM-Ost setzen in Spalte 6 a die Auflage-Nummer laut Schlüsseliste ein.
 7. In Spalte 7 geben Antragsteller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die sechsstellige statistische Nummer des Warenverzeichnisses zum Industriebericht oder der Erzeugnisgliederung für Land-, Forst- und Jagdwirtschaft, Fischerei einschl. Gartenbau und Tierzucht an, Antragsteller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die Warennummer des allgemeinen Warenverzeichnisses (Ausgabe August 1950). Die Ausfüllung der Spalte 7 unterliegt nur der Kontrolle der Überwachungsorgane des Währungsgebietes, in dem der Warenbegleitschein genehmigt wurde.
 8. In Spalte 8 ist das Reingewicht (Gewicht der Ware ohne Umschließung, jedoch einschl. des Gewichts leichter innerer Verpackungen) anzugeben.
 9. In Spalte 9 ist die Forderung des Lieferers an den Bezieher einzutragen, und zwar
 - a) bei Verkauf der Rechnungsbetrag,
 - b) bei Lieferung nach erfolgter Lohnveredelung
 1. die Lohnveredelungskosten und
 2. der Fertigwarenwert,
 - c) bei Lieferung nach erfolgter Reparatur nur die Reparaturkosten.Bei Lieferung von Waren zur Lohnveredelung und zur Reparatur sowie bei Versand von Umzugsgut, Geschenken und unberechneten Umschließungen ist die Spalte 9 nicht auszufüllen. Kosten der Verpackung sind, wenn sie gesondert in Rechnung gestellt werden, in Spalte 9 auch gesondert aufzuführen. Bei Lieferung aus Westdeutschland nach Westberlin und umgekehrt ist bei Lohnveredelung und Reparatur diese Eintragung nicht erforderlich.
 10. In dem noch verbleibenden Raum der Spalten 3 bis 9 sind die Anzahl der Positionen (Spalte 3), das Gesamt-Reingewicht (Spalte 8), und die Endsumme der Spalte 9 in Worten wiederzugeben.
Soweit in den Vordrucken eine Spalte 9 a vorhanden ist, ist in dieser die Anzahl der Positionen (Spalte 3) gleichfalls in Worten einzusetzen.
 11. In Spalte 10 ist der Anlaß der Lieferung in Worten einzutragen; Unterstreichen im Vordruck genügt nicht; ferner ist die in Betracht kommende Abkommensposition einzusetzen. Bei Lohnveredelung und Reparatur ist stets anzugeben, ob Lieferung zur Lohnveredelung oder Reparatur (passiv) oder nach vorgenommener Lohnveredelung oder Reparatur (aktiv) erfolgt. Die Eintragung der Abkommensposition unterliegt nur der Kontrolle der Überwachungsorgane des Währungsgebietes, in dem der Warenbegleitschein genehmigt wurde.
Bei Lieferung aus Westdeutschland nach Westberlin und umgekehrt entfällt die Eintragung der Abkommensposition.

Bundesanzeiger

In Spalte 20 ist die Nummer des Warenbegleitscheins mit Schreibmaschine oder Stempel anzubringen.

18. Beim Versand von Umzugsgut entfällt die Ausfüllung der Spalten 6 a, 7, 8, 9, 11, 16 und 17.

Beim Versand von Geschenken entfällt die Ausfüllung der Spalten 6 a, 7, 9, 11 und 17.

19. Bei Sendungen aus Westberlin nach Westdeutschland werden bei Gütern, die auf der Vorbehaltsliste des Interalliierten Kontrollrats vom November 1946 stehen, Unterschrift und Stempel des Senats von Berlin auf Blatt 2 in der Spalte „zugestimmt“ angebracht; in der Spalte „genehmigt“ werden Stempel und Unterschrift der Sowjetischen Kontrollkommission eingesetzt.

Berlin, den 20. Sept.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M-West)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gez. Dr. Kaumann

gez. Orlopp

Anlage 10

(zu Artikel XV des Berliner Abkommens vom 20. Sept. 1951)

Überleitungs-Vereinbarung.

- Die Geltungsdauer der am 2. Juli 1951 gültigen Abwicklungswarenbegleitscheine und der Warenbegleitscheine der Vorgriffsvereinbarung vom 3. Februar 1951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und der entsprechenden Warenbegleitscheine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wird bis zum 31. Oktober 1951 verlängert.
- Die Geltungsdauer der am 2. August 1951 gültigen Zahlungsgenehmigung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und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wird bis zum 30. November 1951 verlängert.
- Ab 23. Sept. 1951 werden die Unterkonten „Va“ als Unterkonten „1“, die Unterkonten „Vb“ als Unterkonten „2“, die Unterkonten „D“ als Unterkonten „3“, die Unterkonten „K“ als Unterkonten „4“ geführt. Ein- und Auszahlungen nach diesem Zeitpunkt, die die Unterkonten „Va“, „Vb“, „D“ und „K“ betreffen, werden auf den entsprechenden Unterkonten „1“, „2“, „3“ und „4“ verbucht.
- Gegenwerte für Waren, deren Verrechnung im Abkommen über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über die Unterkonten „1“ vorgesehen ist und im Rahmen der Vorgriffsvereinbarung vom 3. Februar 1951 über die Unterkonten „Vb“ erfolgt, sind nach Abstimmung auf die Unterkonten „1“ zu übertragen.
- In dem Übereinkommen vom 22. Dezember 1950 über Lieferung und Bezug von Kohle treten in Ziffer 4 anstelle der Unterkonten „A“ des Frankfurter Abkommens die Unterkonten „1“.
- In Artikel VI der Vereinbarung vom 3. Februar 1951 über die zahlungsmäßige Abwicklung von Dienstleistungen treten anstelle der Unterkonten „Vb“ die Unterkonten „2“.
- Zur Bereinigung von Verpflichtungen aus Interzonengeschäften, die bisher noch nicht abgewickelt werden konnten, werden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vereinbart werden.

Berlin, den 20. Sept. 1951.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M-West)

Für die Währungsgebiete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

gez. Dr. Kaumann

gez. Orlopp

In Spalte 11 müssen die Nummer, das Ausstellungsdatum der Zahlungsgenehmigung des Beziehers sowie das auf der Zahlungsgenehmigung vermerkte Unterkonto angegeben sein. Bei Lieferung zur Lohnveredelung und zur Reparatur sind die entsprechenden Angaben der von der Behörde des Lieferlandes ausgestellten Zahlungsgenehmigung einzusetzen.

Bei Lieferung aus Westdeutschland nach Westberlin und umgekehrt ist in Spalte 11 „entfällt“ einzusetzen.

In Spalte 12 sind Stempel des Lieferers, Ort und Datum einzusetzen; bei Warenbegleitscheinen für Umzugsgut und Geschenke ist ein Stempel nicht erforderlich. Die Unterschrift des Lieferers ist auf allen sechs Blättern des Warenbegleitscheins mit Tinte oder Kopierstift (nicht Kugelschreiber) zu vollziehen.

Die Spalte „zugestimmt“ ist für die Überprüfung durch die Kontrollorgane der anderen Währungsgebiete ohne Bedeutung.

Die Spalte „genehmigt“ muß enthalten: außer dem Datum der Ausstellung und der Gültigkeitsdauer

bei Warenbegleitscheinen, die durch die Behörd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West genehmigt wurden: Trockensiegel oder Gummistempel und Unterschrift,

bei Warenbegleitscheinen, die durch die Behörd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genehmigt wurden: Trockensiegel und Unterschrift.

Blatt 2 des Warenbegleitscheins muß handschriftlich mit Tinte unterzeichnet sein, während alle übrigen Blätter faksimiliert sein können.

Nach Genehmigung des Warenbegleitscheins trägt der Lieferer (Verkäufer) beim Versand die tatsächlich gelieferten Mengen, die Gewichte und die Rechnungsbeträge in den Spalten 13 bis 17 ein, die mit den sonstigen Begleitscheinpapieren (Frachtbrief, Ladeschein usw.) übereinstimmen müssen. Diese Eintragungen können handschriftlich (Tinte oder Kopierstift) vorgenommen werden. Es dürfen keine höheren Mengen und Werte geliefert werden, als im einzelnen genehmigt worden sind. Bei Lieferung von Waren zur Lohnveredelung und zur Reparatur, zurückgehendem Pacht- und Mietgut, bei Umzugsgut, Geschenk-sendungen und unberechneten Umschließungen ist die Spalte 17 nicht auszufüllen.

In Spalte 18 ist vor dem Versand die genaue Angabe des Beförderungsmittels einzutragen, bei Lastkraftwagen-Transporten die Zulassungsnummer des Motorwagens und gegebenenfalls die Zulassungsnummer des Anhängers. Bei Bahntransporten (Wagenladung) ist die Wagennummer anzugeben, bei Schifftransporten Name oder Bezeichnung des Schiffes.

Auf den Warenbegleitscheinen der Währungsgebiete der DM-Ost muß bei Eisenbahntransporten die Spalte 18 ferner den Frachtzahlungsvermerk enthalten. Die Eintragungen in Spalte 18 können handschriftlich (Tinte oder Kopierstift) vorgenommen werden.

In Spalte 19 ist entweder der Stempel des Transportunternehmens oder, falls der Lieferer den Transport selbst durchführt, dessen Stempel anzubringen.

문서 번호 3

내독교역의 신용한도

1975년 2월 20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내독성, 바이허트국장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내독성의 바이허트국장이 연방수상에게 보낸 것으로 내독교역과 관련하여 신용한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독 교역에서 대금이 미지불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 1949년에 이미 무이자로 신용대출할 수 있는 신용한도 규정들 도입하였다. 이 규정이 1951년에 베를린 협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문서 2 참조). 1951년에 신용한도는 삼천만 마르크였다. 이 신용한도는 실질적으로 동독만 이용하였다. 그리고 신용한도의 규모 또한 동독의 요청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내독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서독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독은 신용한도의 확대 요청을 항상 받아주었다. 1974년 12월 6일에는 신용한도를 1981년 12월 31일까지 팔억오천만 마르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독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1960년에 도입된 부채 정산조항은 한번만 적용되었다. 그 결과 동독은 신용한도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이자 장기융자처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동독은 증액된 신용한도를 대부분 사용하였다. 1949년에 동독이 사용한 신용한도액이 천육백만 마르크였지만 1958년에 이미 일억오천만 마르크, 1975년에는 칠억구천만 마르크에 달했다.

출처: Bundesarchiv B 288/426

MD Jürgen Weichert
im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Anlage 2
83 BONN-BAD GODESBERG, DEN 20. Februar 1975
KÖLNER STR. 140 306-350
FERNRUF 104- 306-1
ODER 4072 (VERMITTLUNG) 306-1
FERNSCHREIBER 885673

Herrn

MD Dr. C.W. Sanne o.V.i.A.
im Bundeskanzleramt

53 B o n n

H. GL II/2

Jan 21/1

Thunig

J/14

Sehr geehrter Herr Dr. Sanne!

Unter Bezugnahme auf Ihr Schreiben vom 4. Februar 1975 übermittle ich die gewünschte Aufzeichnung des zuständigen Referates meiner Abteilung zu den nach den hier vorliegenden Akten möglichen Feststellungen über frühere politische Erwägungen bei der Gewährung des Swings im innerdeutschen Handel.

Ich war mir nicht ganz sicher, ob nicht mit Ihrer Anfrage eine Ausarbeitung erwartet worden ist, die sich auf die politischen Erwägungen bei der Ausgestaltung und Durchführung des innerdeutschen Handels im allgemeinen beziehen sollte. Eine Rückfrage von MR Dr. Volze bei Frau Thunig-Nittner hat aber ergeben, daß der Auftrag des Bundeskanzlers sich tatsächlich nur auf das Swing-Problem bezog. Falls die Aufzeichnung in der vorliegenden Form noch nicht ausreichend erscheint, bitte ich um telefonischen Rückruf.

Mit freundlichen Grüßen

H. Weichert

Betr.: Der Swing im innerdeutschen HandelI. Entwicklung

Seit 1949 haben sich die beiden deutschen Partner des innerdeutschen Handels im bilateralen Clearing einen technischen Verrechnungsspielraum eingeräumt. Die beiden Abkommenspartner übernahmen im Interesse einer reibungslosen Abwicklung des Handels- und Zahlungsverkehrs die Verpflichtung, sich gegenseitig und zinslos einen Swing einzuräumen, der zur zeitweiligen Abdeckung eines Zahlungsbilanzdefizits genutzt werden sollte. In der Praxis ist der Swing fast ausschließlich und dauernd von der DDR beansprucht worden. Im Interesse der Ausweitung des innerdeutschen Handels wurde der Überziehungskredit von der Bundesregierung auf Drängen der östlichen Seite immer wieder aufgestockt. Der Kreditrahmen betrug

1949	16 Mio VE
1951 - 1952	30 Mio VE
1953 - 1954	50 Mio VE
1955 - 1957	100 Mio VE
1958	150 Mio VE
1959 - 1968	200 Mio VE
1969	300 Mio VE
Januar - 9. Mai 1970	380 Mio VE
10. Mai - Dezember 1970	440 Mio VE
1971	440 Mio VE
1972	505 Mio VE
1973	600 Mio VE
1974	660 Mio VE
1975	790 Mio VE

Bereits nach dem "Frankfurter Abkommen" vom 8.10.1949 - dem ersten Interzonenhandelsabkommen, welches nach der Währungsreform den Waren- und Dienstleistungsverkehr zwischen den beiden Teilen Deutschlands regelte - wurde der östlichen Seite ein Überziehungskredit eingeräumt. Der Swing wurde auf 16 Mio VE (VE = DM) festgesetzt und auf das Unterkonto A mit 15 Mio und das Unterkonto B mit 1 Mio VE aufgeteilt.

Das "Berliner Abkommen" vom 20.9.1951, das in seiner Neufassung vom 16.8.1960, noch heute die rechtliche Grundlage des innerdeutschen Handels ist, sah die Führung von vier Unterkonten und für diese Unterkonten zwei Swing-Beträge von zusammen 30 Mio VE vor. Der Gesamt-Swing von 30 Mio VE war folgendermaßen aufgeteilt: 10 Mio VE auf die Unterkonten 1 (harte Ware) und 4 (Kohle) zusammen und 20 Mio VE auf die Unterkonten 2 (weiche Ware) und 3 (Dienstleistungen) zusammen. Die DDR nutzte den Swing von Anfang an als zinslosen Dauerkredit. Bereits am Jahresschluß 1952 belief sich die Swing-Beanspruchung bei der Bank deutscher Länder auf 13,2 Mio VE.

1953 trat die Bundesregierung für eine Swing-Erhöhung ein, um der DDR die Bezüge von Konsumgütern zu erleichtern. Die Bundesregierung wünschte, daß der Ostseite ein zusätzlicher Swing von 20 Mio VE gewährt werde. Da die Bank deutscher Länder eine Bereitstellung dieses Betrages aus ihren Mitteln ablehnte, ermächtigte die Bundesregierung in einer Kabinettsitzung am 19.5.1953 die Bank deutscher Länder, auf das Kassenkonto der Bundesregierung zurückzugreifen. Auf dieser Grundlage erhöhte sich der Swing für die Unterkonten 2 und 3 von 20 auf 40 Mio VE, für die Unterkonten 1 und 4 verblieb es bei dem Swing von 10 Mio VE.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lehnte es ab, für den

Teilbetrag von 20 Mio VE Kassenmittel über den 1.4.1954 hinaus zur Verfügung zu stellen. Nach Verhandlungen zwischen dem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und dem Zentralbankrat der Bank deutscher Länder erklärte sich die Bank im Dezember 1953 mit der Übernahme der 20 Mio VE vom 1.4.1954 an einverstanden. Im Dezember 1953 scheiterte der Versuch, die DDR zu einer Verzinsung des Swings zu bewegen.

Im Dezember 1954 befürwortete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für 1955 eine Swing-Erhöhung auf 100 Mio VE. Der Zentralbankrat erklärte sich in seiner Sitzung vom 15.12.1954 damit einverstanden, sprach aber die Erwartung aus, daß der Warenaustausch so gelenkt werde, daß die Swing-Ausnutzung sich in einer durchschnittlichen Höhe von 50 Mio VE hält. In den Verhandlungen über die Zusatzvereinbarung zum Berliner Abkommen für das Jahr 1955 kam es über die Frage der Swing-Erhöhung zu Auseinandersetzungen mit den Verhandlungspartnern der DDR. Die DDR forderte zuerst eine Erhöhung des Swings auf 150 Mio VE, wollte dann den Betrag auf 70 Mio VE begrenzt und in 20 und 50 Mio VE aufgeteilt wissen und stimmte dann doch dem westdeutschen Vorschlag zu. In den kommenden Jahren blieb es bei diesem Swing von 100 Mio VE.

Im November 1956 war der Swing bei der Bank deutscher Länder mit 77 Mio VE in Anspruch genommen. Daraufhin bat die Bank deutscher Länder den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entsprechend der 1954 getroffenen Abmachung für eine Rückführung der Swing-Beanspruchung auf 50 Mio VE durch geeignete Maßnahmen im Warenverkehr Sorge zu tragen.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begründete die hohe Swing-Beanspruchung mit den Lieferschwierigkeiten der Ostseite, die durch die Unruhen in Polen und

Ungarn entstanden seien.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wies überdies auf einen vorangegangenen Beschluß des Kabinettsausschusses für Wirtschaft hin, nachdem von einer Kürzung der Lebensmittellieferungen in die Ostzone abgesehen werden sollte, um die dortige Krise nicht zu steigern. Im Februar und März 1957 verhandelte Dr. Leopold von der Treuhandstelle für den Interzonenhandel (TSI) mit den Vertretern der DDR über eine Rückführung des Swings durch Bareinzahlung. Die Deutsche Notenbank überwies daraufhin 20 Mio VE an die Bank deutscher Länder, nahm ihre Braunkohlenbrikettlieferungen in das Bundesgebiet wieder auf und lieferte verstärkt Mineralölerzeugnisse. Danach betrug im April 1957 der Debit-saldo der Deutschen Notenbank auf allen Unterkonten zusammen nur noch 28 Mio VE, das waren 57 Mio VE weniger als Ende 1956.

Im Oktober 1957 setzte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die Deutsche Bundesbank davon in Kenntnis, daß die DDR der TSI vorgeschlagen habe, den Swing-Betrag von 100 Mio VE auf 200 Mio VE zu erhöhen und die bestehenden Unterkonten zu einem Konto zusammenzulegen.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trat für eine geringe^{re} Swing-Erhöhung ein und lehnte eine Aufhebung der Unterteilung in mehrere Konten ab. Es bat die Deutsche Bundesbank um Verzicht auf die Absprache von 1954, daß die Beanspruchung der beiden Teil-Swing-Beträge von 50 Mio VE zusammen möglichst 50 Mio VE nicht übersteigen sollten - eine darauf gerichtete Steuerung der Lieferungen und Bezüge würde angesichts der Zunahme langfristiger Geschäfte schwierig sein. Die Deutsche Bundesbank erwiderte, sie halte einen 100 Mio VE-Swing für ausreichend, wenn die Trennung in zwei Teilbeträge von 50 Mio VE wegfalle, für diesen Fall sei sie zum Verzicht auf die Absprache bereit. Am 30.10.1957 erklärte sich der Zentralbankrat mit einer Swing-Erhöhung auf 150 Mio VE für 1958 einverstanden. Der neue Swing-Betrag von 150 Mio VE wurde aufgeteilt in 110 Mio VE für die Unterkonten 5, 6 und 7 zusammen und 40 Mio VE für das Kehl-Eisen-Konto C allein. Im Februar 1958 war bereits der Teil-Swing von 110

Mio VE (für die Unterkonten 5, 6 und 7) von der Ostseite mit 103 Mio VE in Anspruch genommen.

Im November 1958 kam die TSI in Verhandlungen mit der Ostseite überein, der DDR den Bezug von Steinkohle und die zusätzliche Lieferung von Braunkohlenbriketts zu erleichtern. Das alte Unterkonto 2 wurde gelöscht und ein neues Konto A (Ruhrkohle gegen Braunkohle) errichtet. Für dieses Konto wurde von der Bundesbank ein zusätzlicher Swing von 50 Mio VE gewährt. Der Kredit von 50 Mio VE wurde im Hinblick auf die Langfristigkeit der Braunkohlenbrikettlieferungen zugesagt (die Braunkohlenlieferungen sollten sich bis zum Herbst 1960 hin erstrecken).

Am 16.8.1960 wurde eine Neuordnung des innerdeutschen Handels beschlossen. Die wichtigsten Verbesserungen bestanden in der unbegrenzten Gültigkeitsdauer der ausgehandelten Warenlisten (bisher jährliche Neufestsetzung) und der Reduzierung der Konten auf drei. In der Neufassung des Berliner Abkommens wurde ein Gesamt-Swing von 200 Mio VE festgelegt. Bis 1968 blieb es bei dieser Regelung. Die Hälfte des Swings entfiel danach auf das Konto 1, die andere Hälfte auf die Konten 2 und 3.

Damit die Inanspruchnahme des Swings durch die DDR nicht zu einem langfristigen Kredit für die Ostseite würde, wurde 1960 eine Ausgleichsklausel vereinbart. Danach sollten die Unterkonten jeweils zum 30.6. des Jahres glattgestellt werden. Der Betrag, den die Deutsche Notenbank oder die Deutsche Bundesbank am 30. Juni schulden, sollte durch Übertragung von DM-West auf das Konto S oder zu Lasten eines Guthabens auf dem Konto S ausgeglichen werden. In der Praxis fand der vereinbarte Saldenausgleich nicht um die Jahresmitte statt.

Entweder man akzeptierte von seiten der Bundesrepublik den zu einem anderen Zeitpunkt zustande gekommenen Ausgleich als Jahressaldenausgleich, oder es wurde ganz auf ihn verzichtet. Lediglich am 30.6.1963 kam die Ausgleichsklausel in Anwendung, als der Ostseite an dem Stichtag auf allen drei Unterkonten zusammen ein Guthaben von 3,6¹ VE zustand. Im Dezember 1968 wurde dann die Ausgleichsklausel auch formell aufgehoben.

In der zweiten Hälfte der 60iger Jahre mehrten sich die Stimmen, die eine Swing-Erhöhung forderten, um durch sie die Stagnation im innerdeutschen Handel zu überwinden. Im Juli 1967 bat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die Bundesbank um Zustimmung dazu, für die Swing-Ausnutzung die drei Unterkonten als Einheit zu behandeln und somit den 200 Mio-Swing für den gesamten Verrechnungsverkehr mit der DDR gelten zu lassen. Die Aufteilung in je 100 Mio VE für das Unterkonto 1 und die Unterkonten 2 und 3 zusammen sollte also entfallen, und zwar nach der Vorstellung des BMWi zunächst bis zum 31.12.1969. Die Bundesbank erklärte sich mit einer befristeten Zusammenlegung der beiden getrennten Swing-Beträge zu einem einheitlichen Swing von 200 Mio VE einverstanden. Die Zusammenlegung der beiden Swing-Beträge wurde am 9.8.1967 in einem Briefwechsel zwischen den Unterhändlern festgelegt.

Inanspruchnahme des Swings durch die DDR

Jahr	Swingbetrag (Mio VE)	Durchschnitt der Inanspruchnahme
1962	200	16
1963	200	38
1964	200	40
1965	200	55
1966	200	110
1967	200	172
1968	200	136
1969	360	270
1970 (bis 9. Mai)	380	} 387
(ab 10. Mai)	440	
1971	440	413
1972	585	539
1973	620	595

1968 kam die Bundesregierung zu dem Ergebnis, daß sich eine Steigerung des innorddeutschen Handels ohne eine Erhöhung des Swings nicht verwirklichen läßt. Am 6.12.1968 vereinbarten der Leiter der TSI, Kleindienst, mit dem Ministerstellvertreter Behrendt folgende Regelung:

Die Vereinbarung vom 9.8.1967 über die Zusammenlegung der beiden Swing-Deträge von je 100 Mio VE zu einem einheitlichen Swing von 200 Mio VE wird bis zum 31.12. 1975 verlängert. Von 1969^{an}/bis 1975 wird der Swing jeweils im Januar neu festgesetzt, und zwar in Höhe von 25 % der in Vorjahr eingegangenen Zahlungen für Lieferungen und Leistungen der DDR auf die Unterkonten 1 bis 3 bei der Deutschen Bundesbank.

Am 6. Dezember 1974 wurde eine Vereinbarung paraphiert, nach der die Swing-Regelung vom 6. 12. 1968 bis zum 31. Dezember 1981 mit der Maßgabe verlängert wird, daß die Beträge die Höchstgrenze vom 850 Mio VE nicht überschreiten.



문서 번호 4

동독 경제상황에 관한 차관 회의

1989 년 11 월 6 일

담당자 / 기관: Dr. Wilms, 연방내독관계부 장관(BMB)

Dr. Priesnitz, 연방내독관계부 대표(BMB)

Dr. Sudhoff, 외무부 대표(AA)

Dr. von Würzen, 연방경제부 대표(BMWi)

Dr. Knittel, 연방교통부 대표(BMV)

Dr. Florian, 연방우정부 대표(BMP)

Dr. Bertele, 상임대표국 대표(Stäv)

Dr. Duisberg (고위 당직자)

내용:

이 문서는 1989 년 11 월 6 일 18 시에 열린 독일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차관보 회의에 관한 기록이다. 논의된 문제는 동독 정부로부터 서독 정부에 전달된 경제개혁계획이었다. 동독정부는 경제부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지만 정치체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사회주의통합당의 독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서독에 전달하였다. 서독에게는 동독의 경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치체제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차관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서독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동독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이 동독의 정치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였다. 서독이 동독에 제공할 재정지원은 특히 인프라구축과 환경개선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출처: 독일연방 공문서관, B 136/201 69,221 - 14223 Sta 8 Bd. 3. - 뒤스부르크 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 년 11 월 6 일. 복사본: St Bende, GL 22.

(BAreh, B 136/201 69,221 - 14223 Sta 8 Bd. 3. - Vorlage des MDg Duisber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Rudolf Seiters,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Nr. 74
Besprechung der beamteten Staatssekretäre
Bonn, 6. November 1989

BArch, B 136/20169, 221 – 14223 Sta 8 Bd. 3. – Vorlage des MDg Duisberg an Chef BK, 6. November 1989. Kopien: St Bertele, GL 22.

Betr.: Besprechung im Staatssekretär-Kreis über deutschlandpolitische Fragen am 06. November 1989, 18.00 Uhr

1. Teilnehmer:

Frau BM Dr. Wilms, BMB
 St Dr. Priesnitz, BMB
 St Dr. Sudhoff, AA
 St Dr. von Würzen, BMWi
 St Dr. Klemm, BMF
 St Dr. Knittel, BMV
 St Dr. Florian, BMP
 St Dr. Bertele, StV
 MDgt Dr. Duisberg.

2. Vorbemerkung:

Die von der DDR übermittelten Vorschläge und Wünsche zeigen, daß die neue Führung – eine grundlegende Sanierung der Wirtschaft anstrebt, wohl auch mit weitreichenden Änderungen des wirtschaftlichen Systems,
 – jedoch grundsätzliche Reformen der politischen Struktur vermeiden möchte, insbesondere nicht zu einer Beschränkung des Machtmonopols der SED und zu Zugeständnissen in Richtung auf Pluralismus bereit ist.

Sie erwartet von uns massive finanzielle und technische Unterstützung für ihre Sanierungsbemühungen bei gleichzeitigem Verzicht auf Versuche unsererseits, auf eine politische Systemänderung hinzuwirken.

Objektiv kann die DDR – jedenfalls kurz- und mittelfristig – nicht hoffen, von jemand anderem als von uns wirtschaftliche Hilfe in dem benötigten Umfang zu erhalten. Die Alternative wäre wohl in der Tat eine Politik der Austerität, die

– einerseits den inneren Druck auf Systemveränderungen in der DDR verstärken,
 – andererseits dadurch aber auch das Risiko von Eruptionen mit repressiven Reaktionen beträchtlich erhöhen würde.

An letzterem können wir sowohl aus nationalen als auch aus Gründen einer konstruktiven Weiterentwicklung des West-Ost-Verhältnisses kein Interesse haben. Außerdem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Reformen in der Wirtschaft – selbst wenn man sich strikt auf diesen Bereich beschränken will – eine eigene Dynamik entwickeln und kraft Sachzwangs auch zu Wandlungen im politischen System zwingen.

Aufgrund unseres Interesses an einer evolutionären Entwicklung, die zu besseren Lebensverhältnissen, längerfristig aber auch zu mehr Freiheit in der DDR führt, sollten wir den Wunsch der DDR nach Zusammenarbeit daher nicht zurückweisen. Diese Zusammenarbeit darf jedoch nicht so gestaltet werden, daß sie der Stabilisierung des Systems und des Regimes dient, vielmehr muß der Veränderungsdruck aufrechterhalten werden. Kriterium für Leistungen unsererseits sollte daher sein, daß sie primär den Menschen und allenfalls sekundär dem Regime zugute kommen. Das würde zutreffen bei Maßnahmen

– im Infrastrukturbereich,

–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die wir auch dann durchführen müßten, wenn Deutschland nicht geteilt wäre. Grenzen für unseren Handlungsspielraum ergeben sich – außer durch die finanziellen Belastungen – aus der politischen Akzeptanz. Leistungen unsererseits müssen deshalb Leistungen der DDR gegenüberstehen. Erst wenn die DDR sich sichtbar auf den Weg zu politischen Reformen begeben hat, wird hier (vielleicht) die Bereitschaft wachsen, von unserer Seite größere finanzielle Vorleistungen zu erbringen. Bei der gegenwärtigen, auch kurzfristig kaum vorhersehbaren Entwicklung in der DDR ist in jedem Fall Vorsicht und Zurückhaltung angebracht.

3. Vorgeschlagene Gesprächslinie:

3.1 DDR-Wünsche

Die neue DDR-Führung hat uns sehr rasch intensives Interesse an Weiterführung und Intensivierung der Zusammenarbeit signalisiert. Sie erwartet von uns offenbar massive finanzielle und technische Unterstützung für ihre Sanierungsbemühungen.

Im einzelnen:

3.1.1 Wunsch nach umfassender wirtschaftlicher Zusammenarbeit auf sämtlichen Ebenen, einschließlich Förderung durch Kredite und Bürgschaften etc.

Mögliche Reaktion von uns:

Grundsätzliche Bereitschaft, DDR muß aber Voraussetzungen schaffen durch

– Abbau handelshemmender Maßnahmen,
 – fortschrittliche Joint-venture-Gesetzgebung.

Von unserer Seite kommt dann in Betracht:

– Ausbau der Handelspolitik, u. a. durch zusätzliche Liberalisierung, Marketing-Beratung und Management-Schulung, Einrichtung von Kontaktstellen, Ausbau des Energieverbunds,
 – substantielle wirtschaftliche und finanzielle Hilfen, u. a. durch Aufstockung des bestehenden Bürgschaftsrahmens, Öffnung von ERP-Programmen für die DDR, eventuell Finanzierung von Infrastrukturmaßnahmen.

(Im einzelnen Anlage 1¹, Seite 4 bis 10.)

3.1.2 Wunsch nach mittelfristiger Liquiditätshilfe (d.h. ungebundene Finanzkredite zur Absicherung der geplanten Wirtschaftsreformen im Zeitrahmen bis 1995 in Höhe von 8 bis 10 Mrd. DM).

Mögliche Reaktion von uns:

Wäre unter gegebenen Umständen reine Systemfinanzierung; kann daher nur in Betracht gezogen werden bei wirklicher Reformentwicklung. Aber Hinweis auf bestehende, nicht ausgenutzte Kreditlinie der DDR von 850 Mio. VE im Swing; eventuell Bereitschaft, Swing zu erhöhen (Widerstand der Bundesbank zu erwarten).

3.1.3 Vorschlag, für den Bau der Eisenbahn Hannover-Berlin die Leist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zuschreiben; die DDR wünscht Vergütung für die Durchführung des Projekts und will nur einen Teil der Leistungen selbst erbringen.

Reaktion von uns:

Vergabe der Strecke Oebisfelde-Staaken an westdeutschen Generalunternehmer läge in unserem Interesse. Klarzustellen wäre, daß Gesamtprojekt an den Generalunternehmer vergeben wird, der seinerseits Unteraufträge in festzulegendem

¹ Anlage 1 nicht abgedruckt: Vermerk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betr. Reformen in der DDR und Ausbau der wirtschaftlichen Zusammenarbeit mit der DDR, IV 1 – 02 10 86/1, 2. November 1989.

Umfang an DDR-Firmen vergibt; Zahlungen von uns an den Generalauftragnehmer. Für den Abschnitt in Berlin Vergabe der Leistungen durch den Senat. Klärungsbedürftig bei uns ist der Finanzrahmen (Dyckerhoff & Widman haben Generalunternehmerangebote über 3,2 Mrd. DM ausgearbeitet; hinzu kommen ca. 0,6 Mrd. DM für den Streckenabschnitt in West-Berlin).

Klärungsbedürftig mit der DDR ist der Leistungsumfang (zwei- oder dreigleisig, Ausschluß des Streckenabschnitts in Ost-Berlin) und eventuelle Eigenbeteiligung der DDR an den Kosten (könnte ggf. in einer Weise erfolgen, daß ihr immer noch Gewinn bleibt).

(Im einzelnen Anlage 2².)

3.1.4 Wunsch nach Neuverhandlung und Erhöhung der Postpauschale mit Angebot der Schaltung zusätzlicher Leitungen.

Reaktion von uns:

Erhöhung der bisherigen Pauschale (200 Mio. DM) nur in geringem Umfang sachlich gerechtfertigt. Größere Erhöhung erfordert zusätzliche Leistungen durch Verbesserungen

- im gegenseitigen Postverkehr,
- im gegenseitigen Fernsprechverkehr (Schaltung zusätzlicher Leitungen in beiden Richtungen),
- im Fernmeldeverkehr Bundesgebiet-Berlin (West).

Da Verbesserungen im gegenseitigen Fernsprechverkehr durch unzureichende Kapazität des DDR-Fernsprechnetzes technisch begrenzt sind, sollten wir überlegen, im Rahmen der Postpauschale einen zusätzlichen Teilbetrag zweckgebunden für die Modernisierung des Fernsprechnetzes der DDR zu zahlen, eventuell ergänzt durch Kredit und/oder verlorenen Zuschuß bei Vergabe der Aufträge an unsere Firmen.

(Im einzelnen Anlage 3³.)

3.1.5 Wunsch nach finanzieller Entlastung bei den durch die vorgesehene neue Reiseregelung entstehenden zusätzlichen Kosten.

Reaktion von uns:

Mit steigenden Reisezahlen steigen nicht nur die Devisenaufwendungen der DDR

- für den Umtausch von einmal jährlich 15,- Mark (1988: ca. 40 Mio. DM)
- und für den Saldenausgleich im Eisenbahnverkehr (1988: 70 Mio. VE), sondern auch unsere Ausgaben für
- Begrüßungsgeld (1988: 260 Mio. DM),
- Übernahme eines Teils des Saldenausgleichs im Eisenbahnverkehr (50% des 35 Mio. DM übersteigenden Betrages, 1988: 35 Mio. VE) sowie zusätzliche Vergünstigungen auf der Bundesbahn (50% Ermäßigung, Umwegkarten und IC-Zuschläge kostenlos),
- Kosten für medizinische Hilfe nach dem Gesundheitsabkommen (1988: 43 Mio. DM).

(Zahlen auf der Basis von ca. 2,6 Mio. Reisenden bei einmaligem oder Mehrfach-Besuch – nach DDR-Angaben 6,76 Mio. Reisen).

Das Problem läßt sich nicht finanziell durch Umtausch- oder Reisefondsmodele lösen; sie laufen sämtlich darauf hinaus, daß entweder die DDR oder wir oder beide die Finanzierung der Reisekosten übernehmen.

Zusätzliche Leistungen unsererseits werden politisch nur gerechtfertigt werden können, wenn die DDR ebenfalls etwas Zusätzliches tut. Möglichkeiten für zusätzliche Leistungen sind:

- a) auf unserer Seite:
 - Erhöhung des Begrüßungsgeldes, eventuell unter Herabsetzung des Barbetrages, und Ausgabe von Übernachtungsgutscheinen,
 - volle Übernahme oder Übernahme eines größeren Anteils beim Eisenbahnsaldenausgleich,
 - direkter Transfer an die DDR (wird mangels politischer Akzeptanz bei uns praktisch außer Betracht bleiben müssen);
- b) auf seiten der DDR:
 - Erhöhung des Umtauschbetrages durch Verwendung von Einnahmen aus dem Mindestumtausch,
 - Senkung oder Korrektur beim Mindestumtausch (Befreiung sozial schwacher Gruppen, Verminderung bei Tagesbesuchen, Begrenzung der Mindestumtauschpflicht auf eine bestimmte Anzahl von Tagen, so daß zusätzliche Tage mindestumtauschfrei bleiben); durch erhöhtes Reiseaufkommen könnten Mindereinnahmen im einzelnen möglicherweise insgesamt ausgeglichen werden.

Durch Kombination der genannten Möglichkeiten sind verschiedene Modelle denkbar (im einzelnen Anlage 4⁴). Zusätzliche Leistungen unsererseits sollten in jedem Fall zunächst nur vorübergehend gewährt werden.

Hinsichtlich des Begrüßungsgeldes müssen Möglichkeiten zur Vermeidung von Mißbräuchen gefunden werden:

- entweder durch Kennzeichnung der DDR-Pässe
- oder durch Bindung an die bei Umtausch der 15,- Mark von der Staatsbank der DDR ausgegebene Mitnahmebescheinigung.

Beides bedarf der Erörterung mit der DDR.

Zu überprüfen ist auch die administrative Handhabung der Auszahlung des Begrüßungsgeldes. Die Sozialämter könnten stellenweise (Berlin, grenznahe Gebiete) überfordert werden. Zu erwägen wäre eine Auszahlung an den Postämtern. Festgehalten werden sollte daran, daß Begrüßungsgeld nur an Werktagen, eventuell auch nur Mo – Fr ausbezahlt wird, um reinen Einkaufstourismus einzuschränken.

Langfristig wird das Problem der Ausstattung der DDR-Reisenden mit Reisedevisen nur durch Erhöhung der Wirtschaftskraft der DDR gelöst werden können. Mittelfristig könnte die DDR auch Deviseneinnahmen aus der Entwicklung im West-Ost-Tourismus erzielen, die sie dann für den Ost-West-Tourismus verwenden könnte. Hierzu wären Beiträge von uns möglich (im einzelnen Anlage 1, Seite 10 bis 12).

3.2 Von uns in Gespräche mit der DDR einzubringende Petita:

3.2.1 Generalbereinigung der aus der Massenfluchtbewegung in den letzten Monaten entstandenen Probleme:

- Status (Entlassung aus der DDR-Staatsbürgerschaft?),
- Konsequenzen für Vermögensangelegenheiten einschließlich Haushaltsauflösung, Verbringung von Umzugsgut, Einrichtung eines Devisenausländerkontos,

2 Anlage 2 nicht abgedruckt: Vermerk des Gruppenleiters 22 betr. Schnellbahn Hannover-Berlin, 3. November 1989.

3 Anlage 3 nicht abgedruckt: „Mögliche konzeptionelle Linie für Postverhandlungen“, ohne Datum.

4 Nr. 74A.

- Beschaffung von Urkunden/Zeugnissen aus der DDR,
 - Konsequenzen für Familienzusammenführung, Besuchsreisen in die DDR, Benützung der Transitstrecken nach Berlin (West).
- 3.2.2 Wir sollten darüber hinaus der DDR nahelegen, im Interesse der Stabilisierung grundsätzlich auf dem Weg der Herstellung von Freizügigkeit weiterzugehen, insbesondere
- nicht nur Westreisen mit eventueller Konsequenz der (illegalen) Ausreise zuzulassen, sondern auch die Rückübersiedlung – unabhängig davon, ob die Ausreise im Sinne der DDR-Vorschriften legal oder illegal war;
 - die bestehenden Beschränkungen von Besuchsmöglichkeiten für Übersiedler (grundsätzliche Karenzzeit von 6 Jahren) ganz oder weitgehend aufzuheben.
- 3.2.3 Zur Bewältigung des wachsenden Reiseverkehrs sollte auch die Öffnung zusätzlicher Übergänge ermöglicht werden. Wichtig besonders in Berli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Bad Harzburg/Stapelburg.
- 3.2.4 Weitere Erleichterungen im Geschenkverkehr – auch zur Hebung des Versorgungsniveaus in der DDR (im einzelnen Anlage 5A⁵).
- 3.2.5 Lockerung von Hemmnissen im West-Ost-Reiseverkehr – zur Verbesserung der Akzeptanz eventueller Hilfen gegenüber der DDR (im einzelnen Anlage 5B⁶).
- 3.2.6 Angesichts der Lockerung in den DDR-Medien sollte die Zulassung westlicher Zeitungen nicht mehr ein so großes Problem sein; daher
- Zulassung von Geschenk-Abonnements von Wochen- und evtl. auch Tageszeitungen (die jetzt schon in Interhotels gegen DM zu erhalten sind);
 - Zulassung der Mitnahme solcher Zeitungen durch Besuchsreisende.
- 3.2.7 Aufgrund der Fluchtbewegung ist der Nichtkommerzielle Zahlungsverkehr notleidend geworden. Ohne Einschluß können die bisherigen Zahlungen nicht mehr geleistet werden. Irgendwelche finanziellen Leistungen an die DDR wären politisch nicht zu vertreten, wenn hier gekürzt werden müßte. Erforderlich ist
- eine einmalige Zahlung der DDR möglichst bald von 50 Mio. DM,
 - laufende Zahlungen der DDR ab 1991 in Höhe von 100 Mio. DM statt 70 Mio. DM jährlich.
- (Im einzelnen Anlage 6⁷.)

3.3 Laufende und geplante Umweltvorhaben

Zur Zeit werden 6 Pilotprojekte von uns mit etwa 300 Mio. DM gefördert; einige beziehen sich direkt oder indirekt auf die Elbe. Hinsichtlich der Werra steht eine Reaktion der DDR noch aus. Die DDR hat im letzten Beauftragengespräch die Förderung von 11 weiteren Projekten (zum Teil ebenfalls mit Wirkung für die Elbe) vorgeschlagen; geschätzter Gesamtaufwand 349,5 Mio. DM, den wir allerdings keineswegs voll übernehmen würden. Die Vorschläge werden sachlich noch geprüft. Die laufenden Verhandlungen über die Reinhaltung der Elbe könnten in weitere konkrete Projekte einmünden. Außerdem gibt es Wünsche Berlins (im einzelnen Anlage 7⁸).

Die Förderung von Umweltschutzprojekten erfordert die Schaffung eines entsprechenden Haushaltstitels, da die bestehenden Titel bei BMU und BMB nach Zweckbestimmung und Höhe nicht ausreichen. Dies sollte bei geeigneter Gelegenheit geklärt werden.

(Duisberg)

5 Anlage 5 nicht abgedruckt: „Vorschläge für Verbesserungen: A. im Geschenkverkehr in die DDR, B. im Reiseverkehr in die DDR“.

6 Ebd.

7 Anlage 6 nicht abgedruckt: Vermerk des Gruppenleiters 22 „Nichtkommerzieller Zahlungsverkehr“, 2. November 1989.

8 Anlage 7 nicht abgedruckt: Vermerk des Referats 221 betr. Förderung von Umweltschutzprojekten in der DDR und in Berlin (Ost), 221 – 35020 – Um 9, 2. November 1989.

문서 번호 5

한스 모드로우의 정부 성명 - “책임공동체”가 아닌 양 독일의 “계약 공동체”

1989 년 11 월 17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각료 회의(Ministerrat) 의장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내용:

1989 년 11 월 13 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동독 내각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동독의 정부를 구성할 것을 위임 받았다. 동독의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한 모드로우는 정당들에게 -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이하 SED), 독일기독교민주당(이하 CDU), 독일민주농민당(이하 DBD), 독일자유민주당(이하 LDPD), 독일국민민주당(이하 NDPD) -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치 연합을 토대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스 모드로우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이 정부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회주의 체제는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하며 그를 위해 경제적 성과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동독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동독 경제에 안정과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개혁이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개혁은 다양한 분야, 사실 동독 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체제의 개혁; 경제적 주체 개개인의 자기 책임과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제 개혁; 교육 개혁; 지금까지보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새로운 에너지 계획; 국가 서비스와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행정 개혁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동독의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동독은 개혁 이후에도 바르샤바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며 유럽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비사회주의 경제권과는 상호 이익에 기초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이 구성된 정부는 서독과의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것은 평화 유지, 군비 축소, 경제, 과학 기술, 환경 보호, 교통, 우편, 통신, 문화, 관광 및 포괄적인 인도적 분야 등 사회 정치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새로운 정부는 유엔과 그 산하 조직과의 건설적인 협력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출처: 1989 년 11 월 18/19 일자 노이에스 도이칠란트(Neues Deutschland) 지

Regierungserklärung von Ministerpräsident Hans Modrow

Berlin, 17.11.1989

Herr Präsident, verehrte Abgeordnete!

Am 13. November haben Sie mich zum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gewählt und beauftragt, die Regierung der DDR zu bilden. Ich danke Ihnen für dieses Vertrauen und bitte Sie vor allem die neue Regierung auf jede Weise zu unterstützen. Diese Regierung, die ich ihnen nach vorangegangenen Konsultationen mit den sie tragenden politischen Parteien - SED, CDU, DBD, LDPD, NDPD - vorschlagen werde, ist eine Regierung der Koalition, eines neuverstandenen, kreativen politischen Bündnisses; das zeigen auch die Positionspapiere dieser Parteien. Sie will alles tun, damit die eben begonnene demokratische Erneuerung des gesamten öffentlichen Lebens tiefe Wurzeln bekommt und behält. Sie will alles tun, damit die dringend notwendige Stabilisierung unserer Wirtschaft erreicht und das Sozialprodukt wieder real vergrößert wird. Dafür sollten sowohl alle in der Nationalen Front vertretenen Parteien und Organisationen als auch die Kirchen und die verschiedenen Interessengruppen ihre Ansichten, ihren Rat einbringen. Das gilt auch für die sorbischen Bürger unseres Landes.

Erneuerung - ein vielgestaltiger, widersprüchlicher und zorniger Prozeß

Die demokratische Erneuerung, ein vielgestaltiger, auch widersprüchlicher und zorniger Prozeß, ist von Hunderttausenden im Volk begonnen worden, die wahrhaftig aus sich heraus und auf die Straße gegangen sind. Der Wille zur Erneuer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nd ihres Staates hat Millionen Bürger erfaßt und ist so zur politischen Gewalt geworden, politische Parteien und gesellschaftliche Gruppen sind selbstbewußt hervorgetreten. Dem Volk der DDR, das einen guten Sozialismus will, wird diese Regierung verpflichtet sein.

Das aber heißt mehr als Arbeit für alle und sicheres Wohnen für jeden und anständig einkaufen können, obwohl dies schon sehr viel bedeutet. Ein besserer Sozialismus - das müssen Chancen für alle sein, sich ein Leben zu schaffen, das bunt und inhaltsreich ist, Individualität aufleben läßt und Kameradschaft im Kollektiv ermöglicht, statt daß der eine des anderen Deibel ist. Individualität ist hier, glaube ich, das, was zu achten ist. Politische und ideologische Toleranz gehört unverzichtbar dazu. Ein solcher Sozialismus, der sich nur durch die Arbeit seiner Bürger zu einer Leistungsgesellschaft entwickeln kann, sollte in der Lage sein, nach Maßgabe seiner ökonomischen Ergebnisse für alle Bürger soziale Sicherheit zu gewährleisten. So bitten wir aller Bürger, diese Regierung zu unterstützen. Wir brauchen von denjenigen, die sich dazu bereit finden, einen Vertrauensvorschuß, und ich weiß, daß ich damit schon viel verlange. Deshalb will ich hier erklären: Diese Regierung wird nur das versprechen, was sie wirklich halten kann. Deshalb will sie jeden Werktätigen dazu auffordern, so ergebnisreich wie irgend möglich zu arbeiten, zügig und viel rationeller, in jeder Stunde und für jede Mark, die bezahlt wird. Dafür die Rahmenbedingungen zu schaffen ist unser Auftrag.

Das in harter Arbeit Geschaffene nicht in den Rauch schreiben

Wir bekennen uns zu den Leistungen der Werktätigen in all den vergangenen Jahrzehnten. Immer wieder kommt in diesen Tagen der Wille zum Ausdruck, das in harter Arbeit Geschaffene zu erhalten, nichts aufzugeben, die Mühe all der schweren Jahre nicht in den Rauch zu schreiben. Im Gegenteil - diese Substanz, das große Eigentum des Volkes in der Industrie wie in den anderen Wirtschaftsbereichen, wollen wir nutzen und leistungsfähiger machen. Die Wirtschaft der DDR aus der Krise zu führen, ihr Stabilität zu verleihen und Wachstumsimpulse zu geben, ist jetzt die

wichtigste Aufgabe der Regierung, und diese Aufgabe werden wir mit eigener Kompetenz anpacken. Verantwortlich sind wir der Volkskammer, und ihr haben wir Rechenschaft zu legen. Wir verstehen das als Rechenschaft vor dem Volk. Jeder, der bei uns in dieser Arbeit helfen will, ist willkommen. Jeder, der um den lebenswichtigen Wert einer funktionierenden Wirtschaft weiß, und wer weiß das wohl nicht, sollte diese Erkenntnis mit Taten beweisen. Nur ein ökonomisch starker Staat kann viel für die Bürger tun. Nur ein wirtschaftlich potenter Staat kann ökologischen Fortschritt erreichen. Nur durch wirtschaftliche Effizienz kann der Lebensstandard erst einmal gehalten und - wenn wir das Nötige geleistet haben - auch gehoben werden.

Diese scheinbaren Selbstverständlichkeiten sind Grundpfeiler der Regierungspolitik, weil wir es mit der Ökonomie wie mit der Demokratie sehr ernst meinen. Dies ist die klare Absage an bisherige Einschränkungen der Regierungsarbeit, an frühere Bevormundung, an willkürliches Kommandieren der Wirtschaft zum Schaden der Wirtschaft durch das ehemalige Mitglied des Politbüros des ZK der SED Günter Mittag. Es gibt auf Antrag von Volkskammerfraktionen den durch die Volkskammer angenommenen Beschluß, Amts- und Machtmißbrauch in der Zeit der früheren - wie es hieß - Partei- und Staatsführung zu untersuchen. Ich begrüße den Beschluß. Es sollten in dieser Sache Zeichen gesetzt werden.

Diese Tatsachen stehen fest: Die Volkswirtschaftspläne wurden nicht sauber bilanziert, der Wettbewerb der Betriebskollektive wurde auf zum Teil unrealistische Ziele gerichtet. Gewerkschaftliche Mitbestimmung ihres demokratischen Charakters beraubt.

Durch einseitige und auch willkürliche Investitionspolitik haben sich die Disproportionen zwischen Final- und Zulieferindustrie wesentlich vergrößert, und der Zustand der Grundfonds hat sich deutlich verschlechtert. Die für 1986 bis 1990 geplanten Produktionsleistungen bleiben hinter den Zielen erheblich zurück, ebenso die vorgesehenen Einnahmen des Staatshaushalts.

Die für den Verbrauch und die Sozialpolitik vorgesehenen Größenordnungen sind erreicht oder überschritten worden, wodurch sich das Verhältnis von Kaufkraft und absetzbaren Warenfonds ständig verschlechtert hat.

Auch durch fortgesetzte Aufnahme von Krediten bei Banken kapitalistischer Länder wurde über die Verhältnisse der DDR disponiert, was zu starken außenwirtschaftlichen Belastungen führt, die auf den Binnenmarkt und auf die Investitionsmöglichkeiten negativ zurückwirken.

Die Wahrheit wurde oft, allzuoft vorenthalten

Die Medien durften diese Fakten und Zusammenhänge nicht darstellen und konnten dies auch nicht, weil den Journalisten nur geschönte, verfälschte oder für eine Analyse ungeeignete Fakten zur Verfügung standen. Die meisten Versuche, Teilwahrheiten mitzuteilen, scheiterten oder wurden unterbunden. Sogar den Volksvertretern wurde die Wahrheit oft, allzuoft vorenthalten.

Auch und gerade eingedenk all dieser Tatsachen sollen für diese Regierung andere Maxime gelten, nämlich jene, die vom Volk als Tugenden geschätzt werden: Offenheit und Ehrlichkeit, Ordnung und gesetztreues Verhalten, Bescheidenheit und Sparsamkeit, Fachkompetenz statt Losungen oder flotte Redensarten. Was im Betrieb von jedem Werktätigen gefordert wird, muß auch für die Regierung, für die Staatsorgane insgesamt gelten: Qualitätsarbeit. Wo sie nicht geleistet wird, kann und muß sie durch die Bürger eingefordert werden, auch nachdrücklich und öffentlich.

Mehrheit der Bürger beweist ein waches oder erwachendes Selbstbewußtsein

Verehrte Abgeordnete! Wir alle erleben in diesen Tagen einen faszinierenden, wahrhaft bewegenden Vorgang: Die Mehrheit der Bürger ist im besten Sinne politisiert, beweist ein waches oder erwachendes Selbstbewußtsein. Hunderttausende, ja Millionen sind aufgebrochen, um die neuen Reisemöglichkeiten zu nutzen, Verwandte oder Bekannte in der BRD und in Westberlin zu sehen oder sich dort einfach mal umzusehen - und die allermeisten kommen wie selbstverständlich in ihre Heimat zurück, animiert, oft auch motiviert für das Bleiben, Leben und Arbeiten in der DDR. Wer diese Öffnung der Grenzen - ein historischer Vorgang, auf den die ganze Welt blickt - nicht als unwiederlegbaren Beweis für die unumkehrbare Wandlung von Politik und Leben in der sozialistischen DDR sieht, ist blind oder böswillig.

Was sich hier nach dem 7. Oktober 1989 an demokratischen und im besten Sinne des Wortes volkstümlichen Veränderungen vollzogen hat, ist unumkehrbar - das Volk würde jeden beiseite fegen, der eine Wiederherstellung alter Verhältnisse zu versuchen wagt. So möge man - wo dies noch der Fall ist - aufhören, weitere Schritte einzuklagen, weitere Vorleistungen von der DDR zu fordern. Wir sehen zugleich zwei Probleme. Einmal das zeitweilige Fehlen vieler Werktätiger am Arbeitsplatz. Sie nutzen die Freiheit des Reisens ohne Einsicht in die Notwendigkeit, die materiellen Grundlagen unseres Landes ständig und zuverlässig zu schaffen. Erster Überschwang ist verständlich. Arbeitsausfall, der die wirtschaftlichen Probleme vergrößert und so uns alle trifft, können wir uns weniger denn je leisten.

Bereits durch die Ausreisen, die noch nicht aufgehört haben, ist in lebenswichtigen Bereichen die Schmerzgrenze überschritten. Wir werden Löcher zu stopfen und Lösungen zu finden suchen, appellieren jedoch zugleich eindringlich an alle Bürger, die in DDR ihr Zuhause haben, nicht durch Unbesonnenheit das Funktionieren von Wirtschaft und öffentlichen Diensten weiter zu gefährden.

Stabilität der DDR ist eine Bedingung für Stabilität in Mitteleuropa

Zum anderen darf die Öffnung der Grenzen in der DDR zu keinem wirtschaftlichen und währungspolitischen Aderlaß mit Langzeitwirkung führen. Noch ist es zu früh für die notwendige gründliche Analyse der am 9. November eingeleiteten Veränderungen. Aber ich betone: Stabilität der DDR ist eine Bedingung für Stabilität in Mitteleuropa, ja in Europa, und deshalb ist es im wohlverstandenen Interesse zumindest aller Nachbarn der DDR, den Wandel in unserem Staat nicht nur mit Wohlwollen zu betrachten, sondern auch politisch und wirtschaftlich zu fördern. Ich begrüße in diesem Zusammenhang das verabredete Treffen des Staatsratsvorsitzenden Egon Krenz mit Bundeskanzler Helmut Kohl und füge hinzu: In allen Fragen, die ihre Kompetenz betreffen, und das wird nun die volle Kompetenz sein, ist die Regierung der DDR gesprächsbereit.

Dieses Angebot gilt auch für Politiker und Wirtschaftspolitiker der BRD wie anderer europäischer Länder, die beispielsweise ein Engagement in der Wirtschaft der DDR erwägen, zu prüfen wünschen oder Vorschläge dafür haben.

Ihnen und vor allem den Bürgern der DDR möchte ich sagen: Unsere Wirtschaft hat Probleme, ihre materiellen Ressourcen sind derzeit begrenzt, ihre Proportionen müssen deutlich verbessert, ihre Grundmittel müssen in vielen Bereichen modernisiert werden. Aber die volkswirtschaftliche Substanz unseres sozialistischen Staates ist kräftig genug und tragfähig für eine Stabilisierung in absehbarer Zeit, um dann aus besseren Positionen in den nötigen Aufwind zu kommen. Dies ist auch eine Aufforderung an die ehemaligen DDR-Bürger, die eine Rückkehr wünschen. Möge sich niemand aus Trotz oder falscher Scham nach dem Motto "Was werden denn unsere ehemaligen Kollegen und Nachbarn dazu sagen" von der Heimreise abhalten lassen. Wer unter neuen Verhältnissen einen neuen Anfang in der alten Heimat wünscht, ist als Mitbürger und Mitstreiter

willkommen. Hier kann und soll jeder die Ärmel hochkrepeln - jetzt lohnt es sich.

Und für die Werktätigen der DDR möchte diese Regierung, die sich auf ein breites politisches Bündnis stützt, ein Wort wiederholen, das so oder ähnlich von vorbildlichen Arbeitern jetzt in diesen Tagen zu hören ist: Reiht euch ein mit allen, die Leistung wollen und Leistung geben. Das ist nicht die Zeit, sein eigenes Süppchen auf Sparflamme zu kochen. Wer selbst vorankommen will, muß mithelfen, daß wir alle vorankommen - so und nur so werden wir die besten Zutaten für die eigene Suppe haben.

Meine Damen und Herren! Zum Regierungsprogramm gehören Reformen, wie sie auch von den Parteien und anderen gesellschaftlichen Kräften, von vielen Bürgern vorgeschlagen, gefordert, in Umrissen skizziert worden sind.

Reformen - zügig, aber nicht überhastet

Ich beschränke mich hier zunächst darauf, auf erkannte Notwendigkeiten hinzuweisen und das Prinzip zu bekräftigen, daß wir in Übereinstimmung mit allen politischen Kräften des Landes schrittweise vorangehen wollen, zügig, aber nicht überhastet, nach ordentlichen Analysen und Diskussionen, und zwar öffentlichen Diskussion. Ich nenne als wichtiges:

Erstens Reformen des politischen Systems, verbunden mit gesetzgeberischen Schritten, um Rechtsstaatlichkeit und Rechtssicherheit zu stärken. Dazu gehören insbesondere ein Wahlgesetz ebenso wie ein Gesetz über den Ministerrat sowie ein Mediengesetz. Änderungsvorschläge für das Strafrecht können relativ bald erfolgen. Das Reisegesetz, eventuell auch Paßgesetz genannt, ist nach geführter Diskussion vorzulegen.

Zweitens geht es um eine Wirtschaftsreform, die wirtschaftenden Einheiten zum Ziel haben muß, die Eigenverantwortung der wirtschaftenden Einheiten zu erhöhen, um die Effektivität ihrer Arbeit bedeutend zu vergrößern, die zentrale Leitung und Planung auf das erforderliche vernünftige Maß zu reduzieren sowie - vielleicht ist das die komplizierteste Aufgabe - das Leistungsprinzip mehr und mehr durchzusetzen. Ich schlage vor, die Wirtschaftsreform, ihre Inhalte und Etappen durch spezielle Beratungen der Volkskammer und ihrer Ausschüsse unter Anhörung von Sachverständigen zu profilieren. Die sorgfältige, unvoreingenommene Prüfung der Subventions- und Preispolitik ist in diesem Rahmen eine besondere Aufgabe.

Drittens ist eine Bildungsreform erforderlich. Abgesehen von wissenschaftlichen Vorstellungen, die es dafür gibt, haben, wie mir scheint, die besten pädagogischen Praktiker unseres Landes auf ihren Arbeitsgebieten bereits mehr als jene erste Reform begonnen, die sich an die Schüler und Studenten wendet und sie auffordert: Fürchtet euch nicht, eure Meinung zu sagen!

Viertens brauchen wir ein langfristig angelegtes, von Jahr zu Jahr zu realisierendes und neu zu prüfendes Programm, das zum Ziel haben sollte, Ökonomie und Ökologie mehr als bisher in Übereinstimmung zu bringen, wobei ich hinzufügen möchte, daß die DDR auf diesem Gebiet so schlecht nicht ist, wie es - durch unnötige Geheimhaltung - den Anschein hatte. Niemandem darf es künftig gestattet sein, geplante Umweltschutzmaßnahmen zu streichen oder zu verschleppen. Dringend notwendig ist ein neues Energiekonzept, das zur Senkung der fossilen Energieträger und des Energieeinsatzes führt.

Fünftens eine Verwaltungsreform mit dem Ziel, die staatliche Leitung und Verwaltung zu demokratisieren, ihre Arbeit überschaubarer zu machen sowie nicht zuletzt den Verwaltungsaufwand finanziell und personell erheblich zu verringern. Es versteht sich, daß danach sehr darauf geachtet werden muß, ein Ansteigen des Aufwandes zu verhindern. Dadurch werden

Mitarbeiter des Staatsapparates für andere Aufgaben frei. Sie werden unter voller Wahrung des Arbeitsrechts entsprechend ihrer Qualifikation möglichst nach ihrer Neigung eingesetzt werden, ein Prozeß, der nicht binnen weniger Monate eingeleitet und durchgeführt werden kann. Das gilt ebenso für die Verringerung des Verwaltungspersonals in der Wirtschaft sowie von Organisationen und Institutionen. Es ist zu erwägen, hierfür eine Regierungskommission einzusetzen. Die Mitarbeiter, die bisher mit Fleiß und Umsicht ihre Aufgaben erfüllt haben, sollten so unterstützt werden, daß sie eine zumutbare Tätigkeit aufnehmen können, und an lohnender Arbeit fehlt es in der DDR bekanntlich nicht.

Der neue Ministerat wird nach dem Prinzip der Gemeinsamkeit von Beratung und Einzelverantwortung für die jeweiligen Bereiche zu arbeiten haben. Er hat insgesamt wie in jedem Ressort eine neue, wahrheitsgetreue Analyse der Lage zu gewährleisten, die als Ausgangspunkt der aktuellen Entscheidung dient, und er hat langfristig konzeptionell zu arbeiten, selbständig unter Hinzuziehung anerkannter Fachleute.

Neubestimmung und Aufgaben und Arbeitsweise des Ministerrates

Es dient der Neubestimmung von Aufgaben und der Arbeitsweise des Ministerrates, wenn hier vorgeschlagen wird, die Zahl der Regierungsmitglieder von bisher 44 auf 28 festzulegen. Dies wird die Arbeit überschaubar machen, koordinierte Entscheidungen erleichtern sowie den Aufwand für Leitung und Verwaltung reduzieren. Es versteht sich, daß die Regierung hier mit gutem Beispiel voranzugehen hat.

Gestatten Sie mir, nun Ausführungen zu Teilgebieten zu machen, damit die Absichten in besonders wichtigen Punkten deutlich werden. Da unser Wirtschaftsgefüge aus dem Gleichgewicht geraten ist, sieht es die Regierung als ihre vordringliche Verantwortung an, Maßnahmen zur Stabilisierung der Ökonomie zu treffen.

Probleme anpacken, auch unkonventionell

Erstens geht es dabei um die Stabilisierung der materiellen Produktion. Vordringlich ist es, in den Betrieben, wo der Arbeitsfluß oft durch Materialmangel, Störungen der Kooperation und Fehlen von Ersatzteilen stockt, bessere Bedingungen zu schaffen. Wir bitten aber auch alle Werktätigen, im eigenen Betrieb mit ihren Gewerkschafts- und Betriebsleitungen die Probleme anzupacken, die sie selbst lösen können, und sei es mit unkonventionellen Mitteln. Es zählt das ökonomische Ergebnis, und dafür ist Kontinuität der Produktion die entscheidene Ausgangsbedingung.

Die Lösung des drückenden Zulieferproblems ist nur durch höhere Leistung in der Zulieferindustrie möglich. Sie sollte moralisch wie materiell besser als bisher stimuliert werden. Ausschlaggebend für das Funktionieren in der Wirtschaft ist ebenso das reibungslose Bewältigen der Transportaufgaben durch die Eisenbahner und die anderen Werktätigen im Verkehrswesen. Und mir wurde gerade gesagt, daß hier ein Riesenumfang auch an Reiseverkehr natürlich vor sich geht. Jeder kennt die Zusammenhänge. Wir bitten alle Werktätigen des Verkehrswesens, sich diesen Aufgaben zu stellen. In allen Arbeitsbereichen sind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stabile Produktion unter Winterbedingungen zu schaffen, wie diese Bedingung auch sein mögen.

Die Mitarbeiter der Ministerien sollten sich an die Basis begeben, um sich mit ihrer ganzen Kraft für Kontinuität der Produktion einzusetzen. Die Regierung wird dafür sorgen, daß unverzüglich die notwendigen Entscheidungen für eine Verbesserung der materiell-technischen Versorgung der Produktionsbetriebe getroffen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ank und Anerkennung zu sagen den vielen Angestellten, Mitarbeitern gesellschaftlicher Organisationen und nicht zuletzt den Angehörigen der Armee, der Schutz- und Sicherheitsorgane für ihren Einsatz vor Ort zur Lösung

volkswirtschaftlicher Aufgaben. Sicher sind damit noch nicht alle Möglichkeiten des Einsatzes von Kräften aus Verwaltungen erschlossen. Für alle Werktätigen in jedem Betrieb gilt: Das Erreichen der Ziele des Volkswirtschaftsplanes 1989 entsprechend den abgeschlossenen Verträgen ist die beste Ausgangsposition für das kommende Jahr.

Planentwurf für 1990 zur Zeit noch nicht ausbilanziert

Auch der Volkswirtschaftsplan 1990 muß im Zeichen der Stabilisierung stehen. Wie die Staatliche Plankommission mitteilt, ist es zur Zeit noch nicht möglich, den Planentwurf auszubalanzieren, vor allem hinsichtlich der Beziehungen mit dem nichtsozialistischen Wirtschaftsgebiet. Aufgabe der Staatlichen Plankommission und der Ministerien ist es, in den vorliegenden Entwurf des Plans für 1990 noch alle materiell möglichen Veränderungen einzuarbeiten, die sich aus der 11. Tagung der Volkskammer und den Vorschlägen ihrer Fraktionen ergeben. Den Kombinat, Betrieben, Einrichtungen und Territorien sind die vorbereiteten volkswirtschaftlichen Anforderungen als staatliche Orientierungsgrößen von der Staatlichen Plankommission und den Ministerien kurzfristig zu übergeben. Mit den Betriebskollektiven und den Gewerkschaftsleitungen sollte beraten werden, wie diesen volkswirtschaftlichen Erfordernissen entsprochen werden kann, die möglichst höher liegen als die von ihnen im August eingereichten Vorschläge. In dieser Situation zählt jede Initiative, zählen gute Ideen und zielstrebiges Handeln doppelt und dreifach.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Umstände wird die Regierung der Volksammer das Projekt für den Volkswirtschaftsplan 1990 zur Erörterung vorlegen. Wir sind überall auf höchste Leistungen angewiesen, nur so sind auch Wirtschaftsreformen gestaltbar.

Zweitens sind Maßnahmen zur Stabilisierung der Versorgung der Bevölkerung zu erarbeiten. Insbesondere geht es um schnell wirksame Maßnahmen zur Steigerung der Produktion von Konsumgütern, vor allem von Waren des täglichen Bedarfs. Alle Möglichkeiten zur Erweiterung des Angebots von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sollten erschlossen werden, und zwar auch durch Förderung von Handwerks- und Gewerbebetrieben.

Wir bekennen uns zu sozialistischem Unternehmergeist

Wir bekennen uns zu sozialistischem Unternehmergeist. Das gilt nicht nur für die Betriebs- und Kombinatdirektoren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sondern auch für alle privaten Betriebe, das Handwerk bis zum Einzelhandel und Gaststätten. Die Übernahme von Kleinbetrieben durch private Unternehmer in der Konsumgüterproduktion, aber nicht nur dort, halten wir für möglich. Über die Größe solcher Betriebe ist gemeinsam nachzudenken. Den ökonomischen Wirkungen von Angebot und Nachfrage und einer entsprechenden flexiblen Preisbildung sollte auf diesem Gebiet mehr Spielraum gegeben werden. Seit langem gibt es Hinweise von Handwerkern und Gewebetreibenden auf Hemmnisse, die ihren Initiativen entgegenstehen. Mit der Handwerkskammer und den Parteien unserer Regierungskoalition sollte geprüft werden, was alsbald verändert werden kann, und Entscheidungen werden nicht lange auf sich warten lassen. Generell ist das Steuerrecht so zu verändern, daß hohe Leistungen gefördert sowie Steuergerechtigkeit und Überschaubarkeit für den Bürger gewährleistet werden. Möglichkeiten von Valutaanrechten bei der Erwirtschaftung von Valutamitteln sind zu überlegen.

Einen gewichtigen und zuverlässigen Beitrag für die Versorgung der Bevölkerung mit Nahrungsgütern und der Wirtschaft mit Rohstoffen werden die Genossenschaftsbauern und Arbeiter der Land-, Forst-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erbringen. Wir stimmen mit den vielen Vorschlägen der DBD, der VEG und anderen Betrieben überein, die Möglichkeiten dafür noch besser zu nutzen. Die Qualität all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nisse konsequent zu erhöhen ist ebenso wertvoll, wie ein reichhaltiges Sortiment anzubieten. Das könnte dem überhöhten Verbrauch von Nahrungsmitteln entgegenwirken, was der Volksgesundheit sehr zuträglich wäre, wie die

Gesundheitskonferenz sehr nachdrücklich unterstrichen hat. Auch in diesem Sinne hat eine bessere Versorgung mit Gemüse und Obst den Vorrang.

Auch in der Land-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kam es zu Rückständen bei der Entwicklung ihrer materiell-technischen Basis, besonders in der Tierproduktion sowie in der Fleisch-, Milch- und Kühlwirtschaft. Zur proportionalen Entwicklung dieses Bereichs und zum Vermeiden von Verlusten ist es notwendig, die erforderliche Entwicklung des Land- und Nahrungsgütermaschinenbaus sowie der Kältetechnik zu sichern. Zur Stabilisierung des Binnenmarktes gehören ferner Maßnahmen, die geeignet sind, den massenweisen Abkauf von Waren, insbesondere von subventionierten Waren, durch bestimmte ausländische Touristen und Spekulanten zu verhindern.

Maßnahmen zum Schutz unserer Währung sind erforderlich

Im Zusammenhang mit den neuen Reiseregelungen ist es erforderlich, Maßnahmen zum Schutz unserer Währung zu ergreifen und Spekulationen mit Geld und Waren entgegenzuwirken. Es wurde eine Arbeitsgruppe eingesetzt, die kurzfristig entsprechende Entscheidungsvorschläge für den Ministerrat vorbereitet.

Als Arbeitsrechnung ist für diese Arbeitsgruppe festgelegt, solche Vorschläge und Maßnahmen zu unterbreiten, die sich nicht nachteilig auf die Bürger der DDR auswirken, sondern ausschließlich eine spekulative Ausnutzung bestehender Preis- und Kursunterschiede verhindern sollen. Die vorgesehenen weiteren Schritte zur Einführung von Produktivlöhnen sollten nicht weiterhin zu einer allgemeinen Lohnerhöhung führen, sondern höhere Leistungen im Rahmen des Lohnfonds stimulieren. Die Betriebsdirektoren werden wir berechtigen, im Rahmen des geplanten Lohnfonds über eine leistungsgerechtere Entlohnung der Werktätigen, worin Arbeiter und auch die Kräfte im wissenschaftlich-technischen Bereich und Meister einzubeziehen sind, zu entscheiden, und zwar in Übereinstimmung mit der BGL. Wo mit weniger Mitarbeitern die geplante oder eine höhere Leistung erreicht wird, sollte es möglich sein, Teile des eingesparten Lohnfonds für diese höhere Leistung einzusetzen. Das werden wir in Abstimmung mit der Gewerkschaft durch Rechtsvorschriften regeln. Entsprechende Regelungen wollen wir auch für die LPG, GPG sowie die Betriebe der Land-, Forst-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treffen. Allen Bürgern, die ihr Geld auf Sparkonten haben, garantiert die neue Regierung die Sicherheit ihrer Einlagen.

Drittens gehören zur wirtschaftlichen Gesundung Maßnahmen zur Stabilisierung der Staatsfinanzen. Nach Einschätzung des Ministers der Finanzen ist es derzeit nicht möglich, den Staatshaushaltsplan für 1990 zu bilanzieren. Es handelt sich um ein Einnahme-Defizit von rund 15 Milliarden Mark. Für einen Ausgleich hat das Ministerium für Finanzen bisher keine ausreichenden Vorschläge. Die neue Regierung muß sich deshalb der schweren Aufgabe unterziehen, beide Seiten des Staatshaushalts - Einnahmen und Ausgaben aller Art - erneut durchzurechnen. Es liegt auf der Hand, daß die zu geringen Einnahmen vor allem aus der ungenügend bilanzierten Leistungsentwicklung der Wirtschaft resultieren. Aber das ist nicht allein der Zusammenhang. Die Kosten für so manche Forschungsarbeiten sind zu hoch, gemessen an ihrem Nutzen, und viele Investitionen sind zu teuer, bringen nicht genügend ökonomischen Nutzen. Vielerorts sind die Produktionskosten gestiegen, und zwar nicht immer aus objektiven Gründen. Mit Verlust arbeitende Betriebe belasten unser volkswirtschaftliches Konto ebenso wie zu hohe Bestände brachliegender Werte. Aber auch Verschwendung, zu hoher Verwaltungsaufwand und unsinnige Subventionen - für Schnittblumen oder Zeitungsannoncen etwa - führen zu Disproportionen zwischen Verbrauch und Leistung. Diese Knäuel zu entwirren verlangt Sachkunde und Augenmaß, nicht zuletzt aber auch das Aufgreifen der vielen Hinweise auf Vergeudung von Staatsgeldern und zu hohe Verwaltungsausgaben.

Viertens sind Schritte zur Stabilisierung unserer Außenwirtschaftsbeziehungen erforderlich. Ich betone: Außenwirtschaftliche Stabilität ist für die gesamte Wirtschaft der DDR eine Lebensfrage, ja

Überlebensfrage. Um den Anforderungen gerecht zu werden, müssen sich Industrie und Außenhandel aufveränderte Bedingungen einstellen.

Kooperation mit der UdSSR ist Gewähr für Entwicklung unserer Volkswirtschaft

Es gibt sie in der UdSSR und in den anderen sozialistischen Ländern, in den Vorbereitungen für den gemeinsamen Markt der EG sowie in anderen Teilen der Welt. Die Zusammenarbeit mit der Sowjetunion ist eine entscheidende Gewähr für die weitere Entwicklung unserer Volkswirtschaft. Dem Handel und der Kooperation mit der UdSSR gebührt daher ungeteilte Aufmerksamkeit, beginnend mit Vertragstreue. Die DDR strebt danach, auch die Außenwirtschaftsbeziehungen mit den sozialistischen Ländern bei Wahrung der gegenseitigen ökonomischen Interessen zu erweitern und zu vertiefen, und wir werden uns auch dabei auf neue Bedingungen einzustellen haben, die sich aus Wirtschaftsreformen ergeben. Im Handel mit dem nichtsozialistischen Wirtschaftsgebiet halten wir am Prinzip des gegenseitigen Vorteils fest. Wir sind daran interessiert, Export und Import zu erweitern sowie Kooperation und andere Formen der Zusammenarbeit mit kapitalistischen Firmen auszubauen. Die DDR ist offen für Vorschläge kapitalistischer Partner, die bisher bei uns hinhaltend behandelt wurden oder auf taube Ohren stoßen mußten. Joint ventures, Investitionsbeteiligung, Gewinntransfer, Pilotprojekte im Umweltschutz sind bei uns jetzt keine Fremdwörter mehr. Das heißt, im Interesse der Erhöhung der Leistungskraft unserer Wirtschaft ist die Regierung der DDR bereit, die Zusammenarbeit mit Firmen der westlichen Industrieländer zu fördern, damit mehr und bessere Erzeugnisse für den Außen- und Binnenmarkt zur Verfügung stehen, und wir wissen, daß dieses Ergebnis im gegenseitigen Interesse sein muß. Wir setzen auf eine konstruktive Zusammenarbeit, um auch kurzfristig alle Möglichkeiten für unsere Außenwirtschaftstätigkeit zu nutzen. Die Voraussetzungen für Kontakte und Informationen auf allen Ebene - vom Betrieb bis zu den wirtschaftsleitenden Organen - werden wir verbessern. Den Importanforderungen, den Anforderungen aus dem Tourismus, vor allem den mit den neuen Reisemöglichkeiten verbundenen Erwartungen der Bürger kann gegenwärtig nicht im gewünschten Umfang entsprochen werden. Eine schrittweise Verbesserung dieser Lage ist nur durch Erhöhung der Exportkraft, durch Exportüberschüsse möglich. Deshalb ist es die unmittelbar und dringliche Aufgabe, alle Exportverträge zu erfüllen und für 1990 durch weitere Verträge die Voraussetzungen für den lebensnotwendigen Import von Rohstoffen, Konsumgütern, Maschinen und Ausrüstungen zu schaffen.

Verehrte Abgeordnete! Hier und heute ist nicht die Zeit, mit großen Worten über eine Wirtschaftsstrategie für die 90er Jahre zu sprechen. Aber wir werden alle dazu bereits gegebenen Anregungen wie auch künftige Vorschläge aller politischen Parteien und Gruppierungen aufnehmen. Sie sind uns wertvoll für die Projektierung der ökonomischen und sozialen Entwicklung der DDR in den kommenden Jahren, eine zweifellos komplizierte Aufgabe, für deren Lösung wir auf den Rat vieler kluger Köpfe angewiesen sind. Geht es doch um Neubestimmung von Struktur- und Sozialpolitik, um die Einheit von Ökonomie und Ökologie, die tiefere internationale ökonomische Integration und vieles mehr.

Städtebaupolitik mit Bürgern umsetzen

Zweifelsohne ist auch die Städtebaupolitik als eine wesentliche Aufgabe der Regierung zu betrachten und sie in unmittelbarem Kontakt mit den Bürgern unseres Landes praktisch umzusetzen. Wir sollten den Vorschlag folgen, bei der Regierung eine Arbeitsgruppe Gesellschaftskonzeption und Stadtentwicklung zu bilden, und sie beauftragen, Vorschläge für wirksame Schritte auf diesem Gebiet auszuarbeiten, Ideen von Architekten und Städtebauern liegen hierzu seit längerem vor. Wir sollten sie nutzen. Ich nenne hier nur Stichworte: Die Bezirke und Kreise müssen in stärkerem Maße über ihre Kapazitäten selbst verfügen können. Es kommt darauf an, Wohnungsbau, Instandhaltung, Wohnraumwirtschaft und Wohnraumvergabe enger zu

verbinden. Es sollte möglich sein, Etagenwohnungen und Eigenheime aus Volkseigentum zu kaufen sowie größere Wohnhäuser in genossenschaftliche Nutzung zunehmen.

Es ist die Notwendigkeit zu prüfen, ein wirksames staatliches Organ für Frauenpolitik sowie für Familien- und Sozialpolitik zu bilden, das analytisch und vorausschauend arbeiten kann. Wesentlich ist die Verbesserung der Lebenslage der Rentner. Es ist eine Variante für eine künftige Rentenreform zu arbeiten. Die Hilfe für pflegebedürftige Menschen aller Lebensalter sollte ausgebaut werden, ebenso die Integration von Behinderten. Hier kann die sich jetzt formierende Vertretung aller Behinderten wertvollen Rat und Unterstützung geben. Die vorhandenen Bedingungen für die Entwicklung der Familien sollten variantenreicher gestaltet werden, damit Frauen und Männer ihre Verantwortung besser wahrnehmen können. Die neue Regierung sollte das Streben der Frauen nach einer dem modernen Sozialismus gemäßen Qualität der Gleichberechtigung zwischen den Geschlechtern unterstützen und sich für eine höhere Repräsentanz der Frauen in Politik, Staat und Wirtschaft einsetzen.

Ein großer kultureller Rückstand unserer Gesellschaft - trotz beachtlicher Errungenschaften DDR gerade auf diesem Gebiet - besteht in der praktischen Nichtgleichstellung der Frauen. Zu den vielfältigen Notwendigkeiten, dies zu ändern, gehören auch Gedanken über Quotierungen für Zusammensetzungen, vielleicht auch künftig der Volkskammer und des Ministerrates. Im kommunalen Bereich wird Sozialpolitik vor allem dann mit Leben erfüllt, wenn die Volksvertretungen mit den Bürgern gemeinsam Entscheidungen über den Einsatz von Mitteln und Kapazitäten sowie die Schaffung neuer Einrichtungen treffen. Ein Wort zur Wirtschaftsreform, die - so unserer Vorschlag - von der Volkskammer gesondert diskutiert werden sollte, sobald die Regierung tragfähige Vorschläge vorgelegt hat, die auch eine zeitliche Abfolge der einzelnen Schritte erkennen lassen.

Wirtschaftsreform bedeutet nicht die Abschaffung der Planung

Aus den Positionspapieren aller politischen Parteien unserer Koalition ist die Übereinstimmung zu entnehmen, daß Wirtschaftsreform nicht Abschaffung der Planung bedeutet. Wohl aber sollte die neue Regierung bei der Wirtschaftsreform sich ebenso deutlich davon leiten lassen, den Markt mit seinen Ware-Geld-Beziehungen zum organischen Bestandteil sozialistischer Planwirtschaft zu machen.

Nicht Planung ohne Markt, nicht Marktwirtschaft statt Planwirtschaft. Das Leben verweist uns auf ein sozialistisches Wirtschaftssystem, in dem Planung und Markt so verbunden sind, daß in allen Gliedern unserer Volkswirtschaft ohne zentralisierte Planbürokratie effektiv und für die Bedürfnisse der Bürger der Volkswirtschaft und einer ertragreichen Außenwirtschaft produziert werden kann. Das wird unser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auf festere Füße stellen und dem Staatshaushalt die notwendigen Einnahmen bringen.

In erster Linie geht es darum, den Betrieben und Kombinatn Raum zur Begegnung zu geben. Sie brauchen ein Feld selbständiger, eigenverantwortlicher Entscheidung, brauchen die Möglichkeit, die Mittel für die Amortisation der Grundfonds und für die erweiterte Reproduktion nicht nur zu erwirtschaften, sondern darüber auch weitgehend in eigener Kompetenz zu verfügen, und das heißt, sie materiell auch realisieren zu können.

Finanzielle und materielle Prozesse müssen dafür in Übereinstimmung gebracht werden, denn mit Geld allein kann man bekanntlich auch nicht viel erreichen.

Zu messen ist der Beitrag der Betriebe für die Gesellschaft an dem, was sie auf dem Binnen- und Außenmarkt verkaufen und Erlösen, wie sie also tatsächlich zum Wachstum des

Nationaleinkommens beitragen. Die Wirtschaftsreform muß zu einer grundlegenden Erneuerung der sozialistischen Planwirtschaft führen, zur Demokratisierung der Planung. Sie erfordert eine neue Stellung der Betriebe im Wirtschaftssystem, nämlich so gestaltet, daß sie sich als sozialistische Warenproduzenten voll entfalten, ihre Verantwortung auf dem Markt voll wahrnehmen können und die wirtschaftliche Rechnungsführung voll durchgesetzt ist. Dementsprechend ist die Rolle der Kombinate als wichtige Form der Wirtschaftsorganisation neu zu bestimmen.

Der Eigenbau von Rationalisierungsmitteln sollte nach volkswirtschaftlichen Effektivitätskriterien durchdacht werden. Es geht um eine Volkswirtschaft, die dem wissenschaftlich-technischen Fortschritt aufgeschlossen ist, ihn im Zusammenwirken von Produktion und Wissenschaft in neuer Weise herausfordert. Demokratisierung der Planung verlangt, die Konzipierung der Pläne tatsächlich in den Betrieben zu beginnen. Sie müssen von den gesellschaftlichen Bedürfnissen ausgehen, in volkswirtschaftlichen Orientierungsgrößen und staatlichen Aufträgen zum Ausdruck kommen, vor allem aber in deren Wirtschafts- und Handelsverträgen. Produktions- und absatzpläne müssen auf Verträgen beruhen.

Ausarbeitung von Strategien entsprechend den ökologischen Bedingungen

Wirtschaftsreform bedeutet also, den Wirtschaftsaufbau von unten nach oben neu zu gestalten. Das bedingt einen neuen Charakter und eine neue Rolle der zentralen Planung. Sie sollte sich konzentrieren auf ausgeglichene volkswirtschaftliche Proportionen und Verflechtungen, eine effektive volkswirtschaftliche Struktur der Produktion bei zunehmender Arbeitsteilung, die Ausarbeitung langfristiger Strategien für die ökonomische und soziale Entwicklung, die den ökologischen Bedingungen entsprechen, so für die Versorgung mit Rohstoffen und Energieträgern, sowie auf stabile Staatsfinanzen auf der Grundlage ausgeglichener Proportionen von Kauffonds und Warenfonds. Das Bilanzsystem muß seiner administrativen Zuteilungsfunktion entkleidet werden, auf seine eigentliche Rolle zurückgeführt werden, nämlich proportionale und rationelle Lösungen für das vertragliche Zusammenwirken der Wirtschaftseinheiten zu finden, vorbereiten und zu unterstützen.

Mit einem neuen Verständnis des Verhältnisses eigenverantwortlicher Wirtschaftseinheiten und einer an Grundprozessen orientierten zentralen Leitung und Planung muß auch eine Neubestimmung der Geld-, Finanz- und Kreditbeziehungen sowie der Preisbildung erfolgen. Die Preise müssen den volkswirtschaftlich begründeten Aufwand widerspiegeln und Druck auf die Kostensenkung ausüben. Der Nettogewinn muß viel mehr zum "Zünglein an der Waage" werden, auf effektive und bedarfsgerechte Produktion lenken.

Mit der Wirtschaftsreform werden wir bestrebt sein, die ökonomischen und materiell-technischen Bedingungen für die Land-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so zu entwickeln, daß eine stabile Produktion landwirtschaftlicher Erzeugnisse und ihre Verarbeitung mit hoher Effektivität gewährleistet sind. Das schließt die weitere Entfaltung der Kräfte des genossenschaftlichen Eigentums ein, insbesondere genossenschaftliche Demokratie und Verteilungsweise. Die Bauern sollten in ihren LPG über die zweckmäßigsten Formen der Organisation, Kooperation und Kombination der Produktion umfassender selbst entscheiden. Auf diese Weise ist die Selbstverwaltung der Genossenschaften weiter auszugestalten, die volle Verfügung über die Ergebnisse ihrer Arbeit für Akkumulation und Konsumtion nach Leistungsprinzip auf der Basis ökonomischer Normative zu gewährleisten. Die Räte für Land-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sind aus der Abhängigkeit von den Räten der Kreise zu lösen. Sie sollten Körperschaften der LPG, GPG, VEG sowie anderer Betriebe und Einrichtungen der Land-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sein. In allen Wirtschaftsbereichen wird die Regierung dafür sorgen, daß staatliche Aufgaben auf die Hauptergebnisse beschränkt werden, die Rolle der Wirtschaftsverträge angehoben wird, verstärkt ökonomische Normative angewandt und Investitionen langfristig eingeordnet werden. Zu erhöhen

ist die Verantwortung der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r Räte für die komplexe ökonomische und soziale Entwicklung im Territorium. Sie sollen in eigener Verantwortung über den Einsatz der mit dem Volkswirtschaftsplan für das jeweilige Territorium festgelegten Gesamtfonds beschließen. Vor allem müssen sie über eigene Einnahmequellen verfügen.

Die Wirtschaftsreform wird kein einmaliger Akt sein. Ihre Ausarbeitung muß eine umfassende Gemeinschaftsarbeit sein. Auch dafür liegen viele Vorschläge der Parteien, Wissenschaftler und Wirtschaftler vor. Wir brauchen ein Wirtschaftssystem, das flexibel und zu ständiger Erneuerung fähig ist. Beim Ausarbeiten einer solchen Reform sind Irrtümer und Fehler, das muß so offen gesagt werden, nicht von vornherein auszuschließen. Auch und gerade deshalb, bedarf diese Reform der Öffentlichkeit - in der Beratung wie auch in der Kritik.

Wo Verantwortung gegeben ist, muß sie wahrgenommen werden können

Auf der Hand liegende Veränderungen sind umgehend zu vollziehen, so die Reduzierung der allzu großen Zahl von Plankennziffern und des aufgeblähten Berichtswesens sowie die Abschaffung der vielen Formulare, die von Forschern und Entwicklern auszufüllen sind und ihnen einen Großteil Zeit für schöpferische Arbeit rauben. Und welche Fachdirektoren ein Betriebs- oder Kombinatdirektor braucht, das soll er in Zukunft gefälligst selber entscheiden können. Es muß der Grundsatz gelten, wo Verantwortung gegeben ist, muß sie auch wahrgenommen werden können.

Der Erneuerungsprozeß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verlangt die Reform des politischen Systems. Darin sind sich Parteien, Massenorganisationen, Kirchen und neue Bürgerinitiativen einig. Grundanliegen ist eine neu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in der die Bürger ihre Hoffnungen und ihre Selbstbestimmung verwirklichen können. Sie erwarten mit Recht, daß der sozialistische Staat sie nicht verwaltet, sondern ihnen dient.

Dieser Staat muß die sich vollziehenden demokratischen Umgestaltungen fördern und zugleich das friedliche Zusammenleben und die ungestörte Arbeit sowie die Rechte und die Würde der Bürger schützen. Im Rahmen ihrer Kompetenz ist die Regierung offen für alle, die bereit sind, Verantwortung im und für den Sozialismus zu übernehmen. Das ist auch der Sinn dieser Regierungskoalition. Wir werden staatlich-rechtliche Garantien schaffen, um die Erneuerung des Sozialismus in unserem Lande zu fördern und unumkehrbar zu machen. Erforderlich ist eine Qualität der gesamten Staatsarbeit, die Raum für eigene Verantwortung und Entscheidungen der Bürger, politischen Parteien und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gibt. Es muß zum allgemeinen Arbeitsstil werden, freimütig miteinander umzugehen, den Meinungsstreit um unterschiedliche, ja gegensätzliche Positionen und Varianten zu führen, um Entscheidungen treffen zu können, die durchschaubar, realistisch und dem Volk nützlich sind.

Die Wahrnehmung der Rechenschaftspflicht des Ministerrates und seiner Mitglieder vor der Volksammer wird dabei helfen, die Absicht zu verwirklichen. Die aktive Wechselwirkung zwischen Parlament und Regierung muß - ohne Kompetenzen zu verwischen - zu einer politischen Produktionskraft werden. Die Regierung ist und bleibt ein Organ der Volksammer.

Demokratisierung des Staats- und Wirtschaftsapparates

Ausgehend von den Vorschlägen aller Parteien, halten wir eine umfassende Verwaltungsreform ebenfalls für erforderlich. Ihr Grundanliegen ist eine Demokratisierung des Staats- und Wirtschaftsapparates, die Erhöhung seiner fachlichen Kompetenz und Wirksamkeit. Der hohe Leitungs- und Verwaltungsaufwand wird entschieden zugunsten von Produktion und Diensten für die Bevölkerung verringert. Strukturen und Arbeitsweise der Staatsorgane müssen so beschaffen sein, daß der Bürger klar erkennen kann, wer für was verantwortlich ist, wer über sein Anliegen

entscheidet.

Die Verwaltungsreform beginnt beim Ministerrat. Die Veränderungen in den Aufgaben und Inhalten von Ministerien und anderen zentralen Staatsorganen sind ein erster Schritt. Dem werden Festlegungen zur Struktur und Arbeitsweise folgen, die auch eine Aufblähung der Verwaltungen zu verhindern haben.

Gefolgt werden sollte den Vorschlägen örtlicher Räte, mit den nächsten Wahlen die Anzahl hauptamtlicher Ratsmitglieder zu verringern, damit die Effizienz der Leitung erhöht werden kann. Unbedingt verringert werden muß mit der Verwaltungsreform der beträchtliche Planungs-, Kontroll- und Abrechnungsaufwand, um mehr Zeit für kommunale Entscheidungsprozesse und eine bürgernahe Arbeit der Leiter und Mitarbeiter des Staatsapparates zu gewinnen. Notwendig ist, die Arbeit des Ministerrates auf Grundfragen zu konzentrieren und die Verantwortung der örtlichen Staatsorgane für die Entwicklung in den Territorien deutlich auszuprägen. Das muß dazu führen, die umfangreiche Vorgabe von Kennziffern und Bestimmungen für den Einsatz örtlicher Kapazitäten und Fonds rigoros zu verringern.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 Räte werden künftig weitgehend selbst entscheiden, was in den Territorien gebaut und repariert wird oder sonst materiell geschieht.

Entsprechend zahlreichen Vorschlägen werden wir auch die Vielzahl zentraler und örtlicher Kontrollorgane verringern. Die Eigenkontrolle der Volksvertretungen und Räte sollte verstärkt werden. Es versteht sich, daß die neue Arbeitsweise der Medien auch neue Möglichkeiten eröffnet, die unmittelbare Kontrolle der staatlichen Arbeit durch die Bürger auszuprägen. Mit der Verwaltungsreform steht auch die Frage der Wirksamkeit der gegenwärtigen politisch-territorialen Gliederung des Staatsaufbaus in Kreise, Stadtkreise, Stadtbezirke, Städte und Gemeinden auf der Tagesordnung.

Es gilt insbesondere Stellung und Funktion der Städte und Gemeinden, vor allem der Groß- und Mittelstädte, im Staatsgefüge zu erhöhen. Sie müssen als soziale Gemeinschaft der Bürger wirken können. Es ist ihre kommunale Selbstverwaltung schrittweise herauszubilden. Die Stadtverordnetenversammlungen und Gemeindevertretungen sowie ihre Räte brauchen dazu kommunales Eigentum und garantierte Verfügungsrechte über materielle und finanzielle Fonds. Sie werden es künftig selbst in der Hand haben, das kommunale Eigentum als neue Form des sozialistischen Eigentums zu mehren und für das Wohl der Bürger einzusetzen. Betriebe und Einrichtungen, die in erster Linie Leistungen für die Bürger in einer Stadt oder Gemeinde erbringen und jetzt in hohem Maße auf Kreis- oder gar Bezirksebene konzentriert sind, sollten wieder den Städten und Gemeinden zugeordnet werden. An dieser Stelle ist es der Regierung ein Bedürfnis, all denen herzlich zu danken, die gerade in diesen Tagen in den örtlichen Organen des Staates und auch in den staatlichen Organen auf zentraler Ebene verantwortungsvoll ihre Arbeit leisten.

Bürgern muß alles erlaubt sein, was nicht ausdrücklich untersagt ist

Von hohem politischen Rang ist der Ausbau des sozialistischen Rechtsstaates. Dabei geht es nicht um eine Umetikettierung des bisherigen Zusatandes, sondern um eine grundsätzliche Aufwertung des Rechts im Leben der Gesellschaft.

In dem Rechtsstaat, den wir wollen, sind Grund- und Menschenrechte gewährleistet und die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auf der Grundlage des Rechts gestaltet. Entschieden werden wir darauf hinwirken, daß die Gleichheit aller Bürger vor dem Gesetz durch die staatlichen Organe strikt eingehalten wird. Davon hängt die Glaubwürdigkeit unserer Arbeit wesentlich ab.

Die Regierung geht in ihrem Rechtsstaatsverständnis davon aus, daß den Bürgern alles erlaubt sein muß, was nicht ausdrücklich untersagt ist; dem Staat darf nur erlaubt sein, was ihm rechtlich gestattet ist. Zum weiteren Ausbau des Rechtsstaates hält der Ministerrat neben den schon eingangs genannten Gesetzgebungsvorhaben die Vorbereitung eines Gesetzes über die Vereinigungsfreiheit und eines Gesetzes über die Versammlungsfreiheit für erforderlich.

Auch der Wehrersatzdienst und das Verwaltungsverfahren sind nach unserer Auffassung gesetzlich zu regeln. Notwendig sind ebenfalls gesetzgeberische Maßnahmen zur Wirtschaftsreform und zur Verwaltungsreform.

In den Diskussionen und Vorschlägen der in der Regierung vertretenen Parteien wird begründet gefordert, die unterschiedlichen Funktionen von Legislative, Exekutive und Jurisdiktion genau festzulegen und exakt voneinander abzugrenzen. Um auch Garantien gegen Macht- und Amtsmissbrauch zu haben. Deshalb wird die Regierung der Volkskammer Vorschläge für die Neufass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unterbreiten. Der Ministerrat ist dafür, zum Ausbau des Rechtsstaates ein Verfassungsgericht zu bilden und die dafür erforderlichen Maßnahmen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fassung der DDR einzuleiten. Der Ministerrat wird in Kürze der Volkskammer den Gesetzgebungsplan für die jetzt vorrangigen Aufgaben zur Beratung und Beschlußfassung vorlegen.

Staatliche Sicherheit und öffentliche Ordnung sind Grundbedingungen für die Erneuerung unserer Gesellschaft. Hierfür tragen die Bürger und ihre Organisationen, auch die sich neu bildenden Bewegungen, ebenso Verantwortung wie die Schutz- und Sicherheitsorgane. In jüngster Zeit hat Sicherheitspartnerschaft auch in komplizierten Situationen den Weg der Erneuerung begleitet. Wo sie funktioniert, haben Gewalttäter keine Chancen. Das Aufklären und Vereiteln friedensgefährdender Pläne und die Gewährleistung nationaler Sicherheit wird auch weiterhin ein wichtiges Anliegen und Aufgabe sein.

Der Ministerrat bekennt sich uneingeschränkt zu diesem Grundsatz: Rechtsverletzungen werden ohne Ansehen der Person und des Amtes aufgeklärt und geahndet; Gleichheit vor dem Gesetz gilt für alle, ob sie Uniform oder Zivil tragen.

Wir ermutigen die Kirchen zu einem eigenständigen Beitrag

Neues Denken in Fragen der öffentlichen Ordnung und staatlichen Sicherheit muß sich rechtlich und administrativ umsetzen. Dazu gehört die Bildung eines 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 anstelle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erbunden mit einer Verringerung des Aufwandes.

Verehrte Abgeordnete! Die Regierung würdigt ausdrücklich das konstruktive Wirken kirchlicher Vertreter im Ringen um die Erneuerung unserer Gesellschaft. Ihr mäßigender Einfluß in kritischen Situationen verdient Achtung und Respekt. Der Ministerrat der DDR betont seine Absicht, konstruktive, sachliche und vertrauensvolle Beziehungen zu den Kirchen zu unterhalten. Wir ermutigen die Kirchen, durch eigenständige Beiträge Verantwortung für die künftige Gestalt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in der DDR wahrzunehmen.

Die Erneuerung des Sozialismus erfordert eine Reform des Bildungswesens von der Vorschulerziehung bis zur Hochschulbildung. Die Regierung wird im Ergebnis einer breiten öffentlichen Diskussion ein neues Bildungsgesetz erarbeiten und der Volkskammer vorlegen. In gleicher Weise wollen wir eingeleitete Veränderungen im Hochschulwesen zu einer tiefgreifenden Reform auch der Hoch- und Fachschulbildung führen.

Junge Menschen wollen streiten - dafür muß Raum sein

Alles Positive aus Jahrzehnten sozialistischer Volksbildung wollen wir sorgsam in den neuen Entwicklungen aufheben. Aber nicht länger dürfen junge Leute zu Jasagern oder doppelbödigen Anpassungsverhalten erzogen werden. Wie alt wir auch sein mögen, jeder, glaube ich, erinnert sich an seine Jugend, und da läßt sich sagen: Junge Menschen wollen streiten, wollen sich Standpunkte erstreiten. Dafür muß Raum sein. Wir rechnen damit, daß die Lehrer ihre gesamte Persönlichkeit in einer guten Schulatmosphäre in eine neue Erziehungskultur einbringen werden, Individualität und Talente wollen wir so fördern, daß die kommenden Generationen durch Charakter und Bildung für einen menschlichen und produktiven Sozialismus Sorge tragen und dadurch selbst mehr Entscheidungsfreiheit über ihr eigenens Leben gewinnen. Das Volksbildungswesen ist so umzugestalten, daß Leistungen motiviert und gefördert werden. Wie weit die Eigenverantwortung und Profilierung der Schulen im Rahmen einheitlicher Orientierung erhöht werden sollten, bleibt zu prüfen.

Das alles erfordert die Flexibilität der Bildungswege, differenzierte Bildungsabschlüsse einschließlich beruflicher Bildungsmöglichkeiten nach vorzeitigem Verlassen der polytechnischen Oberschule, rationell gestaltete und sozial gerechte Übergänge zwischen den Bildungsstufen, Veränderungen in der Hochschulvorbereitung und der Weiterbildungsmöglichkeiten für alle Bürger.

Die staatsbürgerliche Bildung sollte so gestaltet werden, daß sie für alle auf dem Boden unserer Verfassung stehenden politisch- weltanschaulichen und religiösen gleichermaßen annehmbar ist, von den jungen Menschen angenommen wird sowie ihrem Streben nach sozialer Mitverantwortung in unser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entspricht.

Reglementierung im Bildungswesen radikal abbauen

Uneingeschränkt wird die Chancengleichheit in der Bildung für alle, unabhängig von Weltanschauung, Religion, Geschlecht, sozialer Herkunft und Nationalität gewährleistet. Die Berufsausbildung ist auf der Grundlage der neuen Lehrpläne zu qualifizieren.

Dem muß auch ein den wachsenden Ansprüchen der berufspraktischen und theoretischen Ausbildung dienen. Der Wissenschaftspolitik einschließlich der Hochschulpolitik gebührt ein erstrangiger Plan in einer modern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konzeption. Es wird notwendig sein, von den Wissenschaftlern selbst unsere gesamte Wissenschaftsstrategie neu zu durchdenken. Das betrifft auch die Nutzung de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gerade dort, wo es um Vorlauf für Gesellschaftsstrategie geht. Mit der Neubestimmung der Strukturpolitik wird auch die materielle Basis für wissenschaftliche Spitzenleistungen zu stärken sein. Die Wissenschaftspolitik muß entschieden auf die Internationalisierungsprozesse, auf die künftige Stellung der DDR in einem gemeinsamen Haus Europa, auf enge Kooperation mit den Wissenschaftlern der Sowjetunion und anderer sozialistischer Länder, mit Intensität, aber auch auf die Zusammenarbeit mit Wissenschaftseinrichtungen der kapitalistischen Industrieländer, insbesondere der BRD, eingestellt werden.

Die Reform des Hochschulwesens zielt auf die Durchsetzung hoher Ansprüche an Lehre und Forschung und an deren Einheit. Sie wird in gemeinsamer Arbeit von Wissenschaftlern, Studenten und Praxispartnern zu konzipieren und zu realisieren sein. Grundanliegen sollten höchste wissenschaftliche Qualität, ständige Erneuerung der Lehrinhalte im Ergebnis der Forschungsprozesse, Flexibilität und Formenvielfalt des Lehrprozesses, hohe Selbstverantwortung und ein weiter geistiger Horizont unserer Stunden sein.

Das gesamte Bildungswesen sollte künftig einheitlich und bei radikalem Abbau jeder Reglementierung geleitet werden. Was die Kulturpolitik betrifft, so sind die Verstaatlichung des kulturellen Lebens und die Zentralisierung von Entscheidungen als Haupthindernisse sozialistischer Kulturentwicklung abzubauen. Die Regierung muß die Bindungen für die Entfaltung aller kulturellen Prozesse bestimmen. Notwendig ist ein Plan des Ministerrates zum schrittweisen Ausbau der kulturellen Infrastruktur bei weitgehender Dezentralisierung der Entscheidungen darüber, wie die Mittel dafür eingesetzt werden sollen. Die Verantwortung muß vor allem bei den Kommunen liegen. Das sollte ähnlich für die unbedingt notwendige staatliche Förderung der Künste, des Sports und anderer schöpferischer Tätigkeiten gelten.

Die Regierung bekennt sich zu einer deutschen Kultur in der DDR, die das internationale humanistische Erbe in sich aufnimmt und in die Gestaltung lebenswerter sozialistischer Verhältnisse eingebunden ist. Diese sozialistische Kulturpolitik sollte die Vielfalt der Gruppenkulturen fördern. Anerkennung der kulturellen Identität aller im Lande lebenden ethnischen, sozialen, regionalen, professionellen Gruppen ist nötig, weil gerade in der kulturellen Vielfalt eine wesentliche, bisher kaum entwickelte, kreative Potenz unserer Gesellschaft liegt. Ihr gebührt die Unterstützung durch den Staat. Die Kunstpolitik einer Reigerung schafft keine Kunst, sie muß Kunst fördern durch Bedingungen, die ihre freie und ungehinderte Entfaltung ermöglichen. In diesem Sinne will die Regierung den Rat der Akademie der Künste, der Künstlerverbände, aller künstlerischen Kräfte in unserem Lande hören und aufnehmen.

Der Gesundheit gebührt größte Aufmerksamkeit

Auch im Gesundheitswesen kann die neue Regierung nicht mit Versprechungen antreten, deren Einlösung noch nicht ökonomisch abgesichert ist. Aber wir teilen die Besorgnis angesichts der angespannten Lage in den Pflegebereichen, der instabilen Versorgung mit medizinischem Verbrauchsmaterial, auch wenn hier jüngst manche Verbesserungen erreicht wurden, sowie des schlechten Ausrüstungs- und Bauzustandes vieler Gesundheits- und Sozialeinrichtungen. In Abwägung aller gesellschaftlichen Interessen ist die Entscheidung zu finden, welchen Anteil bei der Verteilung des Nationaleinkommens das Gesundheitswesen künftig beanspruchen soll. Bei der Entwicklung der gesamten Lebensqualität gebührt der Gesundheit und speziell der Eigenverantwortung für eine gesunde persönliche Lebensweise größte Aufmerksamkeit, um auf der Grundlage verbesserter medizinischer Betreuung und Prophylaxe die durchschnittliche Lebenserwartung erhöhen zu können. Die Regierung stimmt der Forderung führender Mediziner zu, daß alle Gesundheitseinrichtungen der DDR umgehend einheitlich geführt werden sollen.

Die Regierungsverantwortung ist auf die strategischen Fragen des Gesundheitswesens zu konzentrieren. Zu sichern sind hohe Eigenverantwortung in den medizinischen Einrichtungen und das Wahrnehmen territorialer Verantwortung für sie. Die Regierung fördert mit zweckmäßigen Maßnahmen zur gesunden Lebensweise die sportliche Freizeitgestaltung der Bürger und das sportliche Leistungsstreben unserer jungen Generation.

In Übereinstimmung mit Artikel 6 der Verfassung sowie den Grundsätzen und Zielen der UNO-Charta wird ein dem Sozialismus und dem Frieden, der Völkerständigung und der Sicherheit dienliches Handeln Maßstab und Leitlinie der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dieser Regierung sein.

Die DDR öffnet sich der Welt

Die DDR wird ihre i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Konventionen und Verträgen übernommenen Verpflichtungen einhalten und erfüllen. Mit der Respektierung des selbstbewußt handelnden mündigen Bürgers, der umfassenden Demokratisierung unserer Gesellschaft, mit der gesamten Erneuerung unserer Gesellschaft schaffen wird neue Grundlagen für eine glaubwürdige

Außenpolitik.

Die DDR öffnet sich der Welt, in der gegenseitige Abhängigkeit immer deutlicher wird, in der Notwendigkeit und Fähigkeit zu kooperativer Gestaltung der Staatsbeziehungen nach Ost und West, nach Nord und Süd als Überlebensfrage hervortreten. Wir sind für Realismus, Berechenbarkeit und Ehrlichkeit in den Beziehungen der Staaten, für Achtung von unterschiedlichen Interessen, für Bereitschaft zu gleichberechtigter Zusammenarbeit und zu vernünftigen Kompromissen.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unseres Landes bedürfen der demokratischen Diskussion, der parlamentarischen Debatte und Kontrolle.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müssen Frieden und freie Entwicklung für den Menschen garantieren. Innere Friedfertigkeit unserer Gesellschaft - als friedliches, Streitbares Gestalten unserer Erneuerung verstanden - sichert äußere Glaubwürdigkeit. Äußerer Frieden und Glaubwürdigkeit helfen uns wiederum bei der Erneuerung.

Diese Grundzüge hervorzuheben heißt auf keinen Fall, negative und gefährliche Tendenzen der internationalen Entwicklung außer acht zu lassen. Vielmehr stellen wir bewußt in Rechnung, daß das Wettrüsten anhält, der Geist der Konfrontation nicht gebannt ist, der Militarismus seine Ziele nicht aufgegeben hat. Beunruhigend für die Welt ist auch das Wiederaufleben des Neonazismus in der BRD.

Zeitalter ohne Krieg durch echte Abrüstung erreichbar

Es ist das Ziel dieser Koalitionsregierung, alles zu tun, damit die DDR den Anforderungen gerecht wird, die an den sozialistischen deutschen Staaten als Faktor der Sicherheit und Stabilität in Europa gestellt werden.

Die Regierung der DDR wird für einen positiven Abschluß der Wiener Verhandlungen über die konventionellen Streitkräfte sowie vertrauens- und sicherheitsbildende Maßnahmen in Europa eintreten. In Abhängigkeit von den Verhandlungsergebnissen sind wir auf der Grundlage der Prinzipien der Gleichheit und der gleichen Sicherheit bereit, weitere Reduzierungen der Volksarmee mit dem Ziel durchzuführen, die personellen, materiellen und finanziellen Aufwendungen für die Landesverteidigung zu verringern.

Der sich erneuernde Sozialismus hat mit seiner in den letzten Jahren entwickelten dynamischen Friedens- und Abrüstungspolitik der Menschen neue Hoffnungen gegeben, daß ein Zeitalter ohne Krieg durch echte Abrüstung erreichbar ist. Die DDR wird, gestützt auf ihre Friedenstradition, in neuer Weise dafür wirken, in den Warschauer Vertragsstaaten und der NATO die gegenseitigen Angriffs- und Vernichtungsfähigkeiten so weit zu reduzieren, daß keine existenzgefährdende Bedrohung mehr besteht. Dementsprechend müssen wir unsere Militärdoktrin neu definieren. Darin sind sich alle meine Regierung tragenden Kräfte einig.

Die Regierung betrachtet die Landesverteidigung als Sache des ganzen Volkes und wird sie zum Schutz der sozialistischen Ordnung und des friedlichen Lebens der Bürger organisieren. Sie wird alles tun, um die Verteidigungsfähigkeit des Landes auf einem hinlänglichen Niveau zu gewährleisten, ihren Bündnisverpflichtungen im Warschauer Vertrag und ihrer friedenspolitischen Verantwortung gerecht zu werden. Die Regierung hält es für erforderlich, das Wehrgesetz neu zu fassen und durch Gesetz einen Zivildienst einzuführen.

Staatsgrenze wird weiter zuverlässig gesichert

Die Staatsgrenze wird weiterhin zuverlässig durch die Grenztruppen gesichert. Herzlichen Dank sagen wir den Grenztruppen für ihren besonnenen und verantwortungsbewußten Einsatz im

Zusammenhang mit den neuen Reisemöglichkeiten.

Die Regierung der DDR hofft, daß von dem Gipfeltreffen der Repräsentanten der UdSSR und der USA Anfang Dezember für die Lösung der internationalen Probleme neue Impulse ausgehen werden. Das enge Bündnis mit der UdSSR und den anderen sozialistischen Staaten bleibt für unser Land fester Rückhalt. Die vielfältigen Beziehungen, vor allem mit der UdSSR, werden wir in neuer Qualität ausdehnen und vertiefen. Das gilt ebenso für die CSSR und die Volksrepublik Polen, unsere unmittelbaren Nachbarn.

DDR steht zu ihren Verpflichtungen im Warschauer Vertrag

Die DDR steht zu ihren Verpflichtungen im Warschauer Vertrag. Sie beteiligt sich mit eigenen Beiträgen an den kollektiven Bestrebungen, seine politische Rolle für die Gewährleistung von Stabilität in Europa zu erhöhen. Meine Regierung wird an einer Bestandsaufnahme der Situation im RGW mitwirken und der Volkskammer konstruktive, realistische Vorstellungen für die Mitwirkung bei der Umgestaltung der Zusammenarbeit im RGW und in anderen sozialistischen ökonomischen Organisationen vorlegen. Damit wollen wir helfen, die gemeinsamen Aufgaben zu formulieren und schrittweise in Angriff zu nehmen. Es wird ein besonderes Anliegen dieser Regierung sein, den eigenen Beitrag unseres Landes für eine europäische Friedensordnung zu erhöhen. Das künftige Haus Europa muß ein Haus gemeinsamer Sicherheit sein. Hier können wir - anknüpfend an realistische Vorstellungen in Westeuropa - durchaus den Begriff der kooperativen Sicherheit akzeptieren: Sicherheit als komplexes Geflecht von Beziehungen politischer, ökonomischer, ökologischer, humanitärer Art unter Zurückdrängung militärischer Faktoren.

In diesem Sinne ist Zusammenarbeit zur gemeinsamen Bewältigung der Probleme in Ost und West der gebotene Ausgangspunkt für die Europapolitik unseres Landes.

EG-Binnenmarkt - Herausforderung und auch Chance

Politisch betrifft das den ständigen Dialog sowie die Schaffung systemübergreifender politischer Strukturen der Kooperation wie regelmäßige Treffen führender Persönlichkeiten. Ökonomisch geht es um gleichberechtigte, gegenseitig vorteilhafte Zusammenarbeit aller Staaten und Völker mit dem Ziel, letztlich zu einem gesamt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zu gelangen. Wissenschaftlich-technisch geht es um Austausch, Arbeitsteilung und Zusammenarbeit statt Vertiefung der technologischen Spaltung. Ökologisch geht es um gesamteuropäische Lösungen und Institutionen, die eine darauf gerichtete Kooperation fördern. Kulturell geht es um die Bewahrung der Traditionen und neue Fortschritte der europäischen Kultur, in die alle ihre Originalität und Werte einbringen. Humanitär gilt es, die Rechte und die Würde des Menschen überall zu garantieren.

In diesem Sinne wird die DDR künftig im KSZE-Prozeß wirken, in diesem Sinne sind wir für die Überwindung der Spaltung Europas, nicht aber als Überwindung der unterschiedlichen sozialen Ordnungen. Die DDR bleibt zutiefst daran interessiert, die Potenzen des politischen Dialogs und der gegenseitig vorteilhaften Zusammenarbeit mit allen Staaten zu nutzen.

Das betimmt auch unsere Haltung zum entstehenden EG-Binnenmarkt. Er ist eine große Herausforderung für uns, die wir auch als Chance begreifen. Wir streben an, mi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möglichst bald kooperative Beziehungen zu vereinbaren.

Zu den grundlegenden Voraussetzungen der Stabilität und des Friedens in Europa gehören stabile, berechenbare Beziehungen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und ihre konstruktive Weiterentwicklung. Mit der Öffnung ihrer Grenzen für den freien Reiseverkehr hat die DDR in diesem Sinne eine weltweit begrüßte und unterstützte Leistung erbracht. Mit der angestrebten, je

bereits begonnenen Reform unseres politischen Systems wird auch der Weg zur Wahrung und Durchsetzung des Selbstbestimmungsprozesses des Volkes der DDR auf neuer Grundlage gegangen. Damit wird die Legitimation der DDR als sozialistischer Staat, als souveräner deutscher Staat erneuert. Nicht durch Beteuerungen, sondern durch eine neue Realität des Lebens in der DDR wird den ebenso unrealistischen wie gefährlichen Spekulationen über eine Wiedervereinigung die klare Absage erteilt.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haben bei aller Verschiedenheit ihrer Gesellschaftsordnungen eine jahrhundertalte gemeinsame Geschichte. Beide Seiten sollten die hierin liegende Chance begreifen, ihrem Verhältnis den Charakter einer qualifiziert guten Nachbarschaft zu geben.

DDR und BRD könnten wertvolles Beispiel für kooperative Koexistenz schaffen

Indem sich beide deutsche Staaten uneingeschränkt respektieren, können sie zugleich wertvolles Beispiel kooperativer Koexistenz schaffen. Die Regierung der DDR ist bereit, die Zusammenarbeit mit der BRD umfassend auszubauen und auf eine neue Stufe zu heben. Dies gilt für alle Fragen: Sicherung des Friedens, Abrüstung, für Wirtschaft, Wissenschaft und Technik, Umweltschutz, Verkehr, Post und Fernmeldewesen, für die Kultur, den Tourismus und den umfangreichen humanitären Bereich.

Wir sind dafür, die Verantwortungsgemeinschaft beider deutscher Staaten durch eine Vertragsgemeinschaft zu untersetzen, die weit über den Grundlagenvertrag und die bislang geschlossenen Verträge und Abkommen zwischen beiden Staaten hinausgeht. Dafür ist diese Regierung gesprächsbereit.

So können beide deutsche Staaten und ihre Beziehungen wichtige Pfeiler für den Bau und die Ausgestaltung des gemeinsamen europäischen Hauses werden.

Auch in Zukunft bleibt die DDR in solidarischer Verbundenheit ein zuverlässiger Partner der Staaten Asiens, Afrikas und Lateinamerikas. Sie wird die berechtigten Vorschläge dieser Staaten zur Lösung ihrer nationalen und sozialen Probleme ebenso engagiert unterstützen wie das Bemühen um friedliche Regelungen für Konfliktherde.

Die DDR tritt nachdrücklich für die friedliche und gerechte Lösung des Nahost-Problems ein. Das schließt die Gewährleist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s palästinensischen Volkes ebenso ein wie die Existenz des Staates Israel in gesicherten Grenzen. Davon ausgehend ist die DDR für normale Beziehungen zu allen Staaten dieser Region. Wenn die DDR sich dem europäischen Kontinent zuwendet, so bedeutet dies nicht, daß sie sich weltweiten Entwicklungen und dem geforderten höheren Beitrag zur Lösung globaler Probleme entziehen möchte. An der Demokratisierung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wird sie ebenso mitwirken wie an der Formierung eines Systems internationaler Sicherheit, das politische, militärische, ökonomische, ökologische und humanitäre Aspekte einschließt. Unverzichtbar bleibt für die DDR nicht zuletzt die konstruktive Mitarbeit in der UNO und ihren Organisationen.

Vehrte Abgeordnete! Lassen Sie mich abschließend sagen: Diese Regierung wird eine Regierung des Volkes und der Arbeit sein. Sie ist eine Regierung des Friedens und des Sozialismus. Das Vertrauen des Volkes zu erwerben und zu rechtfertigen betrachten wir als grundlegenden Auftrag. Ich bitte Sie im Namen aller Mitglieder des Ministerrates um Ihr Vertrauen und zugleich um Zustimmung für die Regierungserklärung.

Quelle: *Neues Deutschland* vom 18./19.11.1989

문서 번호 6

10-개항-프로그램 - 헬무트 콜이 정부 예산 토의에서 발표한 독일 정책에 관한 연설

1989 년 11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 총리(Bundeskanzler)

내용:

1. 서독은 동독의 과도기에 외환기금(Devisenfonds)에 도움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동독 쪽에서 동독을 여행하는 서독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해제하고 동독 여행 규정을 간소화하며 외환기금에 일정한 정도까지 자체적인 기여를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2. 환경, 인프라, 통신 분야를 비롯한 동서독의 협력 지속 및 집중화.
3. 서독은 동독의 정치, 경제적 변화라는 객관적인 전제 하에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4. 모드로우 총리가 발의한 계약공동체에 관한 제도 확립 확대.
5. 서독은 동독 자유선거 이후 연방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6. 지속적이고 공정한 유럽의 평화 질서를 고려해 내독 관계를 전 유럽적 프로세스에 포함시킨다.
7. 서독의 연방정부는 동독 경제가 유럽 공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는 무역협력조약의 체결을 지지한다. 독일통일은 유럽 통합의 맥락 속에서 고려될 것이다. 유럽 공동체는 민주주의적 동독과 기타 중-, 남동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 개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8.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하나의 유럽 건설을 위한 구심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9. 군축과 군비 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0. 통일은 연방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이다.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Hans Jürgen Küsters).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Nr. 122A(Anlage) 643-644.

Zehn-Punkte-Programm **Deutschlandpolitische Rede von Helmut Kohl in der Bonner Haushaltsdebatte**

Bonn, 28. November 1989

(...) Den Weg zur Einheit können wir nicht vom „grünen Tisch“ aus oder mit dem Terminkalender in der Hand planen. Abstrakte Modelle helfen nicht weiter. Aber wir können schon heute jene Etappen vorbereiten, die zu diesem Ziel hinführen. Ich möchte sie anhand eines Zehn-Punkte- Programms erläutern:

ERSTENS: Zunächst sind Sofortmaßnahmen erforderlich, die sich aus den Ereignissen der letzten Wochen ergeben, insbesondere durch die Fluchtbewegung und die neue Dimension des Reiseverkehrs. Die Bundesregierung ist zu sofortiger konkreter Hilfe dort bereit, wo diese Hilfe jetzt benötigt wird. Wir werden im humanitären Bereich und bei der medizinischen Versorgung helfen, soweit dies gewünscht wird. Wir wissen auch, daß das Begrüßungsgeld, das wir jedem Besucher aus der DDR einmal jährlich zahlen, keine Lösung für die Finanzierung von Reisen sein kann. Letztlich muß die DDR selbst ihre Reisenden mit den nötigen Devisen ausstatten. Wir sind aber bereit, für eine Übergangszeit einen Betrag zu einem Devisenfonds zu leisten. Voraussetzung dafür ist allerdings, daß der Mindestumtausch bei Reisen in die DDR entfällt, Einreisen in die DDR erheblich erleichtert werden und die DDR einen eigenen substantiellen Beitrag zu dem Fonds leistet. Unser Ziel ist ein möglichst ungehinderter Reiseverkehr in beide Richtungen.

ZWEITENS: Die Bundesregierung wird wie bisher die Zusammenarbeit mit der DDR in allen Bereichen fortsetzen, die den Menschen auf beiden Seiten unmittelbar zugute kommen. Das gilt insbesondere für die wirtschaftliche, wissenschaftlich-technologische und kulturelle Zusammenarbeit. Besonders wichtig ist eine Intensivierung der Zusammenarbeit im Bereich des Umweltschutzes. Hier kann schon in Kürze über neue Projekte entschieden werden. Außerdem wollen wir daran mitwirken, daß das Telefonnetz in der DDR rasch ausgebaut werden kann. Über den Ausbau der Eisenbahnstrecke Hannover-Berlin wird weiter verhandelt. Darüber hinaus sind Gespräche nötig über grundsätzliche Fragen der Linienführung in einem Europa offener Grenzen und der Anbindung des DDR-Verkehrsnetzes – vor allem im Blick auf die modernen Hochgeschwindigkeitszüge.

DRITTENS: Ich habe angeboten, unsere Hilfe und unsere Zusammenarbeit umfassend auszuweiten, wenn ein grundlegender Wandel des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Systems in der DDR verbindlich beschlossen und unumkehrbar in Gang gesetzt wird. 'Unumkehrbar' heißt für uns, daß sich die DDR-Staatsführung mit den Oppositionsgruppen auf eine Verfassungsänderung und auf ein neues Wahlgesetz verständigt. Wir unterstützen die Forderung nach freien gleichen und geheimen Wahlen in der DDR unter Beteiligung unabhängiger, auch nichtsozialistischer Parteien. Das Machtmonopol der SED muß aufgehoben werden. Die geforderte Einführung rechtsstaatlicher Verhältnisse bedeutet vor allem auch die Abschaffung des politischen Strafrechts.

Wirtschaftliche Hilfe kann nur wirksam werden, wenn grundlegende Reformen des Wirtschaftssystems erfolgen. Dies zeigen die Erfahrungen mit allen RGW-Staaten. Die bürokratische Planwirtschaft muß abgebaut werden. Wir wollen nicht unhaltbar gewordene Zustände stabilisieren. Wirtschaftlichen Aufschwung kann es nur geben, wenn sich die DDR für westliche Investitionen öffnet, marktwirtschaftliche Bedingungen schafft und privatwirtschaftliche Betätigungen ermöglicht. In Ungarn und Polen gibt es bereits Beispiele dafür, an denen sich die DDR orientieren kann. Joint ventures wären unter dieser

Voraussetzung sehr bald möglich. Es besteht schon jetzt große Bereitschaft dazu bei zahlreichen Unternehmen im In- und Ausland.

Dies sind alles keine Vorbedingungen, sondern sachliche Voraussetzungen, damit unsere Hilfe überhaupt greifen kann. Im übrigen kann kein Zweifel bestehen, daß die Menschen in der DDR eine Wirtschaftsordnung wollen, die ihnen auch wirtschaftliche Freiheit und damit Wohlstand gibt.

VIERTENS: Ministerpräsident Modrow hat in seiner Regierungsklärung von einer Vertragsgemeinschaft gesprochen. Wir sind bereit, diesen Gedanken aufzugreifen. Denn die Nähe und der besondere Charakter der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erfordern ein immer dichteres Netz von Vereinbarungen in allen Bereichen und auf allen Ebenen.

Diese Zusammenarbeit wird zunehmend auch gemeinsame Institutionen erfordern. Bereits bestehende gemeinsame Kommissionen können neue Aufgaben erhalten, weitere Kommissionen können gebildet werden. Ich denke dabei insbesondere an die Bereiche Wirtschaft, Verkehr, Umweltschutz, Wissenschaft und Technik, Gesundheit und Kultur. Es ist selbstverständlich, daß Berlin in diese Zusammenarbeit voll einbezogen wird.

Ich rufe alle gesellschaftlichen Gruppen und Institutionen auf, an der Ausgestaltung einer solchen Vertragsgemeinschaft mitzuwirken.

FÜNFTENS: Wir sind aber auch bereit, noch einen entscheidenden Schritt weiterzugehen, nämlich konföderative Strukturen zwisch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zu entwickeln mit dem Ziel, danach eine Föderation, daß heißt eine bundesstaatliche Ordnung in Deutschland zu schaffen. Das setzt zwingend eine demokratisch legitimierte Regierung in der DDR voraus.

Dabei könnten wir uns bald nach freien Wahlen folgende Institutionen vorstellen:

- einen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ß zur ständigen Konsultation und politischen Abstimmung,
- gemeinsame Fachausschüsse,
- ein gemeinsames parlamentarisches Gremium.

Die bisherige Politik gegenüber der DDR mußte sich im wesentlichen auf kleine Schritte beschränken, die die Folgen der Teilung für die Menschen mildern und das Bewußtsein für die Einheit der Nation wachhalten und schärfen sollten. Wenn uns künftig eine demokratisch legitimierte, daß heißt frei gewählte Regierung als Partner gegenübersteht, dann eröffnen sich völlig neue Perspektiven. Stufenweise können neue Formen institutioneller Zusammenarbeit entstehen und ausgeweitet werden. Ein solches Zusammenwachsen liegt in der Kontinuität der deutschen Geschichte. Staatliche Organisation in Deutschland hieß immer Konföderation und Föderation. Wir können uns auch jetzt wieder diese historischen Erfahrungen zunutze machen. Wie ein wiedervereinigtes Deutschland schließlich aussehen wird, weiß heute niemand. Daß aber die Einheit kommen wird, wenn die Menschen in Deutschland sie wollen – dessen bin ich sicher.

SECHSTENS: Die Entwicklung der innerdeutschen Beziehungen bleibt eingebettet in den gesamteuropäischen Prozeß und in die West-Ost- Beziehungen. Die künftige Architektur Deutschlands muß sich einfügen in die künftige Architektur Gesamteuropas. Hierfür hat der Westen mit seinem Konzept der dauerhaften und gerechten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Schrittmacherdienst geleistet.

Generalsekretär Gorbatschow und ich sprechen in unserer Gemeinsamen Erklärung vom Juni dieses Jahres von den Bauelementen eines „gemeinsamen Hauses“. Ich nenne beispielhaft:

- die uneingeschränkte Achtung der Integrität und der Sicherheit jedes Staates. Jeder Staat hat das Recht, das eigene politische und soziale System frei zu wählen;
- die uneingeschränkte Achtung der Grundsätze und Normen des Völkerrechts, insbesondere Acht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r Völker,
- die Verwirklichung der Menschenrechte,
- die Achtung und Pflege der geschichtlich gewachsenen Kulturen und Völker Europas.

Mit alledem wollen wir - so haben es Generalsekretär Gorbatschow und ich festgeschrieben – an die geschichtlich gewachsenen europäischen Traditionen anknüpfen und zur Überwindung der Trennung Europas beitragen.

SIEBTENS: Die Anziehungs- und Ausstrahlungskraf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st und bleibt eine Konstante der gesamteuropäischen Entwicklung.

Wir wollen sie weiter stärken.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ist jetzt gefordert, mit Offenheit und Flexibilität auf die reformorientierten Staaten Mittel-, Ost- und Südosteuropas zuzugehen. Dies haben die Staats- und Regierungschefs der EG-Mitgliedstaaten bei ihrem kürzlichen Treffen einmütig festgestellt. Hierbei ist die DDR selbstverständlich eingeschlossen:

- Die Bundesregierung befürwortet deshalb den baldigen Abschluß eines Handels- und Kooperationsabkommen mit der DDR, das den Zugang der DDR zum Gemeinsamen Markt - auch in der Perspektive 1992 – erweitert und absichert.
- Wir können uns für die Zukunft bestimmte Formen der Assoziierung vorstellen, die die Volkswirtschaften der reformorientierten Staaten Mittel- und Südosteuropas an die EG heranführen und damit das wirtschaftliche und soziale Gefälle auf unserem Kontinent abbauen helfen.

Den Prozeß der Wiedergewinnung der deutschen Einheit verstehen wir als europäisches Anliegen. Er muß deshalb auch im Zusammenhang mit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gesehen werden. In diesem Sinne muß sich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für eine demokratische DDR und für andere demokratische Staaten Mittel- und Südosteuropas offenhalten. Die EG darf nicht an der Elbe enden, sondern muß die Offenheit auch nach Osten wahren.

Nur in diesem Sinne kann die EG Grundlage einer wirklich umfassenden europäischen Einigung werden. Nur in diesem Sinne wahrt, behauptet und entwickelt sie die Identität aller Europäer. Diese Identität ist nicht nur in der kulturellen Vielfalt Europas, sondern auch und vor allem in den Grundwerten von Freiheit, Demokratie, Menschenrechten und Selbstbestimmung begründet.

Soweit die Staaten Mittel- und Südosteuropas die erforderlichen Voraussetzungen erfüllen, würden wir es auch begrüßen, wenn sie dem Europarat – und insbesondere auch der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beiträten.

ACHTENS: Der KSZE-Prozeß ist und bleibt Herzstück dieser gesamteuropäischen Architektur und muß energisch vorangetrieben werden. Dazu müssen die bevorstehenden

KSZE-Foren genutzt werden:

- die Menschenrechtskonferenzen in Kopenhagen 1990 und Moskau 1991,
- die Konferenz übe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in Bonn 1990,
- das Symposium über das kulturelle Erbe in Krakau 1991 und
- nicht zuletzt das nächste Folgetreffen in Helsinki.

Dort sollten wir auch über neue institutionelle Formen der gesamteuropäischen Zusammenarbeit nachdenken. Wir können uns eine gemeinsame Institution zur Koordinierung der West-Ost- Wirtschaftszusammenarbeit sowie die Einrichtung eines gesamteuropäischen Umweltrates vorstellen.

NEUNTENS: Die Überwindung der Trennung Europas und der Teilung Deutschlands erfordert weitreichende und zügige Schritte in der Abrüstung und Rüstungskontrolle. Abrüstung und Rüstungskontrolle müssen mit der politischen Entwicklung Schritt halten und deshalb möglicherweise beschleunigt werden.

Dies gilt im besonderen für die Wiener Verhandlungen über den Abbau konventioneller Streitkräfte in Europa und für die Vereinbarung vertrauensbildender Maßnahmen sowie für das weltweite Verbot chemischer Waffen. Dies erfordert auch, daß die Nuklearpotentiale der Großmächte auf das strategisch erforderliche Minimum reduziert werden. Das bevorstehende Treffen zwischen Präsident Bush und Generalsekretär Gorbatschow bietet eine gute Gelegenheit, den laufenden Verhandlungen neue Schubkraft zu geben.

Wir bemühen uns – auch in zweiseitigen Gesprächen mit den Staaten des Warschauer Paktes einschließlich der DDR -, diesen Prozeß zu unterstützen.

ZEHNTES: Mit dieser umfassenden Politik wirken wir auf einen Zustand des Friedens in Europa hin, in dem das deutsche Volk in freier Selbstbestimmung seine Einheit wiedererlangen kann. Die Wiedervereinigung, das heißt die Wiedergewinnung der 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 bleibt das politische Ziel der Bundesregierung. Wir sind dankbar, daß wir in der Erklärung des Brüsseler Nato-Gipfels vom Mai dieses Jahres dafür erneut die Unterstützung unserer Verbündeten gefunden haben.

Wir sind uns bewußt, daß sich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besonders schwierige Fragen stellen, auf die wir heute noch nicht abschließend antworten können. Dazu gehört vor allem die Frage übergreifender Sicherheitsstrukturen in Europa.

Die Verknüpfung der deutschen Frage mit der gesamteuropäischen Entwicklung den West-Ost-Beziehungen - wie ich sie in zehn Punkten eben erläutert habe - ermöglicht eine organische Entwicklung, die den Interessen der beteiligten Rechnung trägt und ein friedliches Zusammenleben in Europa garantiert.

Nur miteinander und in einem Klima des wechselseitigen Vertrauens können wir die Teilung Europas und Deutschlands friedlich überwinden. Wir brauchen auf allen Seiten Besonnenheit, Vernunft und Augenmaß, damit die jetzt begonnene Entwicklung stetig und friedlich verläuft. Was diesen Prozeß stören könnte, sind nicht Reformen, sondern deren Verweigerung. Nicht Freiheit schafft Instabilität, sondern deren Unterdrückung. Jeder gelungene Reformschritt bedeutet für ganz Europa ein Mehr an Stabilität und einen Zugewinn an Freiheit und Sicherheit.

문서 번호 7

루데비히(Ludewig) 국장이 자이터스(Seiters) 연방 수상청장에게 제출한 초안

1989 년 12 월 13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수상청

내용:

이 문서는 연방수상청 경제국장이었던 요하네스 루데비히가 자이터스 수상청장에게 1989 년 12 월 12 일에 열린 차관회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한 보고이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1990 년 이후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예측하였다.

• 연방재무부의 대략적 산출에 따르면 1990 년 이후 동독의 재정 지원 조치에 투입될 예산은 38 억 도이치마르크에 달한다. 이 중 1990 년에 투입될 예산은 17 억 7 천 7 백만 마르크이다.

• 그 밖에 다음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독 무역 공급을 위한 보증금을 현 45 억 도이치마르크에서 15 억 도이치마르크를 늘린 60 억 도이치마르크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위해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me)(ERP)과 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KfW)의 신용 기금 20 억 도이치마르크를 연방예산을 통해 추가로 늘린다; 동독에 대한 재정 신용 보증금 10~20 억 도이치마르크를 인수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 헬무트 하우스만(Helmut Haussmann) 연방경제부장관은 상기 재정 지원 조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동독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 최종 결정은 1989 년 12 월 15 일 차관급 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22, S. 643 f.

Nr. 122

Vorlage des Ministerialrats Ludewi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Seiters
Bonn, 13. Dezember 1989

BK, 213 – 30104 De 23, BK in Dresden, 19./20.12.1989, Bd. 1. – Hs. vermerkt: „Ø Herrn Teltschik. L[udewig]“ und „zdA T[eltschik] 20/12“

Betr.: Finanzielle Maßnahmen zugunsten der DDR

Bezug: Gestrige Staatssekretärs-Besprechung bei Ihnen

1. Die beigefügte Übersicht des BMF¹ enthält den finanziellen Rahmen der bisher vorgesehenen Maßnahmen zugunsten der DDR.
Dabei handelt es sich noch nicht um haushaltsmäßig genau bezifferte Ansätze, sondern um erste grobe Schätzungen.
Sie belaufen sich insgesamt für den Zeitraum 1990 ff. auf 3,8 Mrd. DM. 1990 werden davon 1,777 Mrd. DM ausgabenwirksam.
2. Bei dem gestrigen Gespräch sind darüber hinaus folgende finanzielle Maßnahmen ins Auge gefaßt worden:
 - (1) Aufstockung des Bürgschaftsrahmens für Lieferungen im innerdeutschen Handel (analog zum HERMES-System mit anderen Ländern)
von derzeit 4,5 Mrd. DM um 1,5 Mrd. DM auf 6 Mrd. DM.
Hintergrund: Der derzeitige Bürgschaftsrahmen von 4,5 Mrd. DM ist gegenwärtig mit 3,0 Mrd. DM belegt, also bei weitem nicht ausgeschöpft.
 - (2) Aufstockung der ERP/KfW-Kreditprogramme (in erster Linie für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BMW_i denkt an eine Aufstockung um 2 Mrd. DM aus dem Bundeshaushalt. Eine derartige Aufstockung würde bedeuten, daß das entsprechende Kreditvolumen um 6 Mrd. DM ausgeweitet werden könnte.
Anmerkung: BMW_i denkt in diesem Zusammenhang daran, daß – wenn seitens der DDR entsprechende Voraussetzungen geschaffen werden – die ERP/KfW-Mittelstandsprogramme auch für private DDR-Unternehmen geöffnet werden.
Falls eine Belastung des Bundeshaushalts mit zusätzlich 2 Mrd. DM in 1990 beim BMF nicht durchsetzbar sein sollte, könnte auch gedacht werden
– an eine Aufstockung um nur 1 Mrd. DM (dies würde eine Ausweitung des Kreditvolumens um 3 Mrd. DM erlauben)
oder
– an eine Aufstockung um 1 Mrd. DM in 1990 und um weitere 1 Mrd. DM in 1991.
 - (3) Übernahme der Bürgschaft für einen Finanzkredit an die DDR
Größenordnung: 1 oder 2 Mrd. DM
Hier gibt es 2 Alternativen:
– Ungebundener Finanzkredit, mit dessen Hilfe die DDR ihre allgemeine Schulden-situation (Umschichtung kurzfristig fälliger Auslandsschulden) erleichtern könnte;
oder
– gebundener Finanzkredit, mit dessen Hilfe die DDR von ihr vorzuschlagene konkrete Einzelprojekte (z. B. im Infrastrukturbereich) finanzieren könnte.
Unsere Präferenz sollte der gebundene Finanzkredit sein, da er sich innenpolitisch wesentlich leichter vertreten läßt.
Bei einem derartigen Finanzkredit müßte wahrscheinlich auch – angesichts der schlechten DDR-Finanzlage – eine Zinssubventionierung ins Auge gefaßt werden.

D. h. „Heruntersubventionierung“ eines 2-Milliarden-DM-Kredits von 8% Markt-zins auf z. B. 3% bedeutet Zinssubventionen von 100 Mio. DM p.a. für die Laufzeit des Kredits.

3. BM Dr. Haussmann wird bei seinem morgigen Gespräch mit der DDR-Regierung² sondieren, in welcher Weise die genannten Finanzierungsinstrumente sinnvoll eingesetzt werden können.
4. Abschließende Entscheidungen sollen in der Staatssekretärs-Besprechung am Freitag, dem 15. 12. 1989, getroffen werden.

L

Nr. 122A
Maßnahmen zugunsten der DDR und Berlin (West)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Referat II A 1. Stand: 12. Dezember 1989.

Zusätzliche Belastungen gegenüber Bundeshaushalt 1990
und Finanzplan bis 1993
(grobe Schätzung)

Maßnahme	Gesamtvolumen Bundeshaushalt	1990		1991	1992	1993
		VE – Mio. DM –	Ansatz			
1. Devisenfonds	4300	–	2150	2150	•	•
Gebühren Postbank	30	–	15	15	•	•
<u>Einsparungen</u>						
– Begrüßungsgeld	–1260	–	–600	–220	–220	–220
– humanitäre Maß- nahmen, insbesondere Häftlingsfreikauf	–850	–	–100	–250	–250	–250
2. Weitere Pilotprojekte						
Umweltschutz	600	500	100	200	200	100
3. Werra-Entsorgung (im F[finanz]p[lan] bereits weitgehend enthalten)	100	100	12	–	–	–
4. Schnellbahnverbindung Berlin-Hannover	3400	3200	200	300	500	500
5. Bahnpauschale	180	–	–	60	60	60
6. Bundeshilfe für Berlin	•	•	•	•	•	•
7. Wirtschaftsförderung	•	•	•	•	•	•
8. Bürgschaften	–	–	–	–	–	–
9. Steuervergünstigungen	•	•	•	•	•	•
Summe	6500	3800	1777	2255	290	190
<i>BMV-Forderung 12. 12.</i>			240	1000		
Nachrichtlich: Postpauschale aus dem Haushalt der Deutschen Bundespost	–	–	226	176	176	176

² Bundesminister Haussmann traf am 14. Dezember 1989 mit der stellvertretenden Ministerpräsidentin Luft und Minister Beil in Berlin (Ost) zusammen. Zu dem Gespräch: Ergebnisvermerk des Ministerialrats Homann, IV 1 – 02 10 86/1, 15. Dezember 1989; BArch, B 136/20578, 221 – 35014 Ge 31 Bd. 1.

문서 번호 8

동독 주민의 개별여행을 위해 1990 년에 제공될 외환에 관한 규정

1989 년 12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동독 중앙은행

내용:

이 문서는 1989 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수상이 이끌던 동독 개혁정부의 재무장관이 동독 주민의 사적 외국여행을 위해 필요한 외환에 관해 내리 조치이다. 이 조치는 동독에 거주하는 동독 주민뿐만 아니라 업무 상 외국에 거주하는 동독 국민 그리고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상호경제협력조약을 체결한 코메콘의 회원국들의 화폐는 헝가리만 제외하고 모두 무제한으로 구입가능하다. 그를 위한 수수료는 구입액의 2%이며 동독 중앙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환전할 수 있는 외화는 200 서독마르크까지이다. 100 서독마르크까지는 동독 마르크와 1:1 의 비율로 구매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금액은 400% 즉 1:5 의 비율로 계산해서 서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다. 14 세 이하의 아동은 50 서독 마르크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여행경비는 동독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이 위임한 기관 그리고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여행경비를 위한 외환구입 사실은 동독주민은 신분증 외국인은 체류허가 또는 사회보장번호 또는 어린이 예방접종증명서에 기록된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5-276, Ausgabetag 29.12.1989

§ 1

Die Ziffer 1 der Anlage 1 zur Anordnung erhält folgende Fassung:

- „1. Alle Autobahnen, außer
 — dem Autobahnzubringer Berlin-Pankow;
 — dem Abschnitt der Autobahn Berliner Ring zwischen dem Abzweig Prenzlau und dem Abzweig Frankfurt (Oder) für den Transit von und nach Berlin (West).“

§ 2

Die Ziffer 2 der Anlage 1 zur Anordnung wird wie folgt ergänzt:

nur für PKW und Kräder:

- 2.19. F 1 von der Ortslage Erxleben bis zur Grenzübergangsstelle Morsleben
 2.20. F 2 von der F 282 über Gefell bis zur Grenzübergangsstelle Juchhöh
 2.21. F 7 von der Autobahn-Anschlußstelle Eisenach West bis zur Grenzübergangsstelle Ifta
 2.22. F 245 von der Autobahn-Anschlußstelle Eilsleben bis Ursleben.

§ 3

Die Anlage 2 zur Anordnung erhält folgende Fassung:

„Für den Transit zwischen der BRD und Berlin (West) festgelegte Straßen:

1. Hirschberg bis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zw.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is Hirschberg
 Von der Grenzübergangsstelle Hirschberg auf der Autobahn Berliner Ring — Hirschberg über das Hermsdorfer Kreuz und das Schkeuditzer Kreuz bis zur Autobahn Berliner Ring
 weiter auf der Autobahn Berliner Ring
 — in östlicher Richtung über den Abzweig Drewitz und den Autobahnzubringer Drewitz bis zur Grenzübergangsstelle Drewitz
 — in westlicher Richtung über den Abzweig Magdeburg und die Autobahn-Anschlußstelle Nauen sowie die F 5 in östlicher Richtung bis zur Grenzübergangsstelle Staaken
 — über die Abzweige Magdeburg, Rostock, Stolpe und den Autobahnzubringer Stolpe bis zur Grenzübergangsstelle Stolpe
2. Wartha bis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zw.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is Wartha
 Von der Grenzübergangsstelle Wartha auf der Autobahn Dresden — Eisenach bis zum Hermsdorfer Kreuz
 weiter wie unter Ziffer 1
3. Marienborn bis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zw.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is Marienborn
 Von der Grenzübergangsstelle Marienborn auf der Autobahn Berliner Ring — Marienborn bis zur Autobahn Berliner Ring
 weiter wie unter Ziffer 1
4. Zarrentin bis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zw.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is Zarrentin
 Von der Grenzübergangsstelle Zarrentin auf der Autobahn Wittstock — Zarrentin bis zum Abzweig Wittstock
 weiter auf der Autobahn Berliner Ring — Rostock bis zum Abzweig Rostock
 weiter wie unter Ziffer 1

Nur für PKW und Kräder:

5. Horst bis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zw.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is Horst
 Von der Grenzübergangsstelle Horst auf der F 5 bis Pritzier
 weiter über Hagenow bis zur Autobahn-Anschlußstelle Hagenow
 weiter wie unter Ziffer 4

6. Morsleben bis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zw.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is Morsleben
 Von der Grenzübergangsstelle Morsleben auf der F 1 bis Erxleben
 weiter über Ursleben bis zur Autobahn-Anschlußstelle Eilsleben
 weiter wie unter Ziffer 3
7. Ifta bis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zw.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is Ifta
 Von der Grenzübergangsstelle Ifta auf der F 7 über Creuzburg bis zur Autobahn-Anschlußstelle Eisenach West
 weiter wie unter Ziffer 2
8. Juchhöh bis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zw. Drewitz, Staaken oder Stolpe bis Juchhöh
 Von der Grenzübergangsstelle Juchhöh auf der F 2 über Gefell bis zur F 282
 weiter auf der F 282 bis zur Autobahn-Anschlußstelle Schleiz
 weiter wie unter Ziffer 1“.

§ 4

Diese Anordnung tritt am 1. Januar 1990 in Kraft.

Berlin, den 21. Dezember 1989

**Der Minister
 für Innere Angelegenheiten
 Ahrendt**

**Anordnung
 über die Aufhebung der Rechtsvorschrift
 zum verbindlichen Mindestumtausch
 vom 21. Dezember 1989**

§ 1

Die Anordnung vom 9. Oktober 1980 über die Durchführung eines verbindlichen Mindestumtausches von Zahlungsmitteln (GBl. I Nr. 29 S. 291) wird aufgehoben.

§ 2

Diese Anordnung tritt am 24. Dezember 1989 in Kraft.

Berlin, den 21. Dezember 1989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Nickel**

**Anordnung
 über den Verkauf von Reisezahlungsmitteln
 anderer Währungen im Jahre 1990 für private Reisen
 von Bürgern der DDR
 — Reisezahlungsmittelanordnung —
 vom 21. Dezember 1989**

Auf der Grundlage des § 7 Abs. 2 des Devisengesetzes vom 19. Dezember 1973 (GBl. I Nr. 58 S. 574) wird im Einvernehmen mit dem Präsidenten der Staatsbank der DDR folgendes angeordnet:

§ 1

- Diese Anordnung gilt für
- Bürger der DDR mit ständigem Wohnsitz in der DDR sowie für Bürger der DDR, die sich im Auftrag von Staatsorganen, staatlichen Einrichtungen, Betrieben, Genossenschaften sowie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der DDR im Ausland aufhalten,

— Bürger anderer Staaten und Staatenlose mit ständigem Wohnsitz in der DDR,
die nach den devisenrechtlichen Bestimmungen Devisenländer sind.

§ 2

(1) Die im § 1 genannten Personen sind berechtigt, im Jahre 1990 Reisezahlungsmittel für private Reisen in folgender Höhe zu erwerben:

1. Währungen der anderen Mitgliedsländer des RGW in unbegrenzter Höhe (außer der Ungarischen Republik),
2. konvertierbare Devisen bis zur Höhe von 200 DM.

(2) Der Umtauschsatz gemäß Abs. 1 Ziff. 2 beträgt für Kinder bis zum vollendeten 14. Lebensjahr 50 % des genannten Betrages.

§ 3

(1) Die im § 2 Abs. 1 Ziff. 1 genannten Reisezahlungsmittel der Währungen der Mitgliedsländer des RGW werden zu den jeweils gültigen Devisenumrechnungssätzen und einer Bearbeitungsgebühr gemäß Gebührenordnung der Staatsbank der DDR in Höhe von 2 % verkauft.

(2) Die im § 2 Abs. 1 Ziff. 2 genannten Reisezahlungsmittel konvertierbarer Devisen werden

- a) im Gegenwert bis zu 100 DM im Verhältnis
1 DM = 1 Mark der DDR und für andere konvertierbare Währungen zum für diese Währungen gültigen Devisenumrechnungssatz,
- b) über einen Gegenwert von 100 DM hinaus mit einem Aufschlag zum gültigen Devisenumrechnungssatz von 400 %
(d. h. — 1 DM = 1 Mark der DDR + 4 Mark Aufschlag = 5 Mark
— für andere konvertierbare Währungen = Devisenumrechnungssatz + 400 % Aufschlag)

verkauft.

(3) Für Kinder bis zum vollendeten 14. Lebensjahr gilt für Buchst. a bis 50 DM und Buchst. b über 50 DM.

§ 4

(1) Die im § 2 genannten Reisezahlungsmittel können in der DDR bei den Filialen und Wechselstellen der Staatsbank der DDR und bei den von der Staatsbank der DDR damit beauftragten Geld- und Kreditinstituten oder Einrichtungen erworben werden.

(2) Die entsprechenden Kreditinstitute und Einrichtungen, ihre Öffnungszeiten und der Verkaufsmodus sind in geeigneter Weise durch die Kreisfilialdirektoren der Staatsbank der DDR für das jeweilige Territorium zu veröffentlichen.

(3) Bürger der DDR können konvertierbare Devisen gemäß § 2 Abs. 1 Ziff. 2 und Abs. 2 auch bei den damit beauftragten Einricht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Berlin (West) erwerben. Sie sind berechtigt, die dazu erforderlichen Beträge in Mark der DDR auszuführen.

(4) Bürger anderer Staaten und Staatenlose mit ständigem Wohnsitz in der DDR können Reisezahlungsmittel nur bei der für ihren Wohnsitz zuständigen Kreisfiliale der Staatsbank der DDR erwerben.

§ 5

(1) Der Verkauf von Reisezahlungsmitteln gemäß § 2 Abs. 1 Ziff. 2 und Abs. 2 wird

- für DDR-Bürger ab vollendetem 14. Lebensjahr im Personalausweis,
- für Staatenlose und Ausländer ab vollendetem 14. Lebensjahr in der Aufenthaltserlaubnis,
- für Kinder bis zum vollendeten 14. Lebensjahr im Sozialversicherungs- und Impfausweis vermerkt.

(2) Ein Verkauf von Reisezahlungsmitteln für Kinder erfolgt nur, wenn neben dem Sozialversicherungs- und Impfausweis des Kindes ein Personaldokument gemäß Abs. 1 eines Erziehungsberechtigten vorgelegt wird.

§ 6

In den Reiseländern nicht verbrauchte Reisezahlungsmittel gemäß § 2 Abs. 1 Ziff. 1 können der Staatsbank der DDR zum Ankauf angeboten werden. Der Ankauf erfolgt zu dem am Tage des Ankaufs gültigen Devisenumrechnungssatz.

§ 7

Für im Jahre 1990 ausgestellte Ersatzdokumente für Personalausweise, Aufenthaltserlaubnisse sowie Sozialversicherungs- und Impfausweise wird der Geldumtausch in den für den Wohnsitz des Antragstellers zuständigen Kreisfilialen der Staatsbank der DDR nach Prüfung der Umtauschberechtigung durchgeführt.

§ 8

Die unberechtigte Inanspruchnahme der Ankaufmöglichkeiten führt zum Verlust des Anspruchs auf Ankauf von Reisezahlungsmitteln für das Folgejahr bzw. für die Folgejahre, sofern nicht die Rückzahlung des unberechtigt erlangten Betrages erfolgt.

§ 9

Diese Anordnung tritt am 1. Januar 1990 in Kraft.

Berlin, den 21. Dezember 1989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Nickel**

**Anordnung
über die Führung von Valutakonten
bei der Staatsbank der DDR
vom 21. Dezember 1989**

Auf der Grundlage der §§ 7 Abs. 2 und 11 Abs. 3 des Devisengesetzes vom 19. Dezember 1973 (GBl. I Nr. 58 S. 574) wird im Einvernehmen mit dem Präsidenten der Staatsbank der DDR folgendes angeordnet:

§ 1

Diese Anordnung gilt für

- Personen mit Wohnsitz oder ständigem Aufenthalt in der DDR,
- Organe und Einrichtungen, Genossenschaften, Vereinigungen, Gesellschaften, Parteien und gesellschaftliche Organisationen, deren Sitz oder Ort der Geschäftsleitung sich in der DDR befindet.

§ 2

Die im § 1 Genannten können bei der für ihren Wohnsitz, Sitz bzw. Ort der Geschäftsleitung zuständigen Filiale der Staatsbank der DDR Valutakonten führen.

§ 3

(1) Auf Valutakonten können im Rahmen der devisenrechtlichen Regelungen erworbene Zahlungsmittel konvertierbarer Währungen gutgeschrieben werden.

(2) Die Valutakonten werden in D-Mark geführt.

(3) Die Verzinsung beträgt

- bei täglich fälligen Guthaben 2,5 % pro Jahr,
- bei Guthaben mit einer Kündigungsfrist von einem Jahr 4 % pro Jahr.

Wird über langfristig angelegte Guthaben in Ausnahmefällen nach Abstimmung mit der Staatsbank der DDR ohne Einhaltung der Kündigungsfrist verfügt, wird der vorfristig verfügte Betrag für die Dauer der unter einem Jahr liegenden Anlage mit 2 % pro Jahr verzinst.

§ 4

Inhaber von Valutakonten können über das Kontoguthaben uneingeschränkt verfügen.

문서 번호 9

동독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1990 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마크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규정

1989 년 12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장관 우타 니켈

내용:

이 문서는 1989 년 말에 한스 모드로우수상이 이끌던 동독 개혁정부의 재무장관이 외국에 영주하는 주민이 1990 년에 동독에 체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동독의 관청에 관한 규정이다. 그들은 3:1 의 비율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마크를 교환할 수 있다 (동독 마르크 3: 서독 마르크 1). 이들이 구입한 금액은 은행의 확인서를 발부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위의 기관에서 은행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시 환전하거나 예치해 둘 수 있다. 동독을 떠나면서 사용하지 않은 동독의 화폐를 다시 동독으로 가지고 들어올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한다. 동독 마르크의 판매와 구입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89, Nr. 26, S. 277, Ausgabetag 29.12.1989

§ 5

Gutschriften zugunsten und Verfügungen zu Lasten des Valutakontos in anderen konvertierbaren Währungen außer D-Mark erfolgen zu den von der Staatsbank der DDR festgelegten Tageskursen für den nichtkommerziellen Zahlungsverkehr.

§ 6

Gehen Rechte an Valutakonten kraft gesetzlicher oder testamentarischer Erbfolge auf Erben oder Vermächtnisnehmer mit Wohnsitz, ständigem Aufenthalt oder Sitz im Ausland über, kann durch diese über das Valutakonto gemäß § 4 dieser Anordnung verfügt werden.

§ 7

Der Präsident der Staatsbank der DDR legt die zur Durchführung dieser Anordnung erforderlichen Bedingungen für die Kontoführung sowie die Grundsätze für die Abwicklung der Zahlungen fest und informiert hierüber die Kontoinhaber.

§ 8

(1) Diese Anordnung tritt am 1. Januar 1990 in Kraft.

(2) Sie findet Anwendung auf alle zu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er Anordnung bestehenden Valutaanrechtskonten und die dazu abgeschlossenen Kontoverträge. Die bestehenden Valutaanrechtskonten werden als täglich fällige Einlagen behandelt. Einlagen mit Kündigungsfrist bedürfen neuer Vereinbarungen des Kontoinhabers mit der Staatsbank der DDR.

Berlin, den 21. Dezember 1989.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Nickel**

Anordnung

**über den Erwerb von Mark der DDR durch Bürger
mit ständigem Wohnsitz im Ausland bei Aufenthalt
in der DDR im Jahre 1990
vom 21. Dezember 1989**

Im Einvernehmen mit dem Präsidenten der Staatsbank der DDR wird folgendes angeordnet:

§ 1

Diese Anordnung gilt für den Erwerb von Mark der DDR durch Bürger mit ständigem Wohnsitz im Ausland anlässlich von Aufenthalten in der DDR bei den damit beauftragten Geld- und Kreditinstituten sowie Einrichtungen der DDR.

§ 2

(1) Die im § 1 genannten Bürger können Mark der DDR gegen DM im Verhältnis

1 DM = 3 Mark der DDR ankaufen.

(2) Über den gemäß Abs. 1 erworbenen Markbetrag wird eine Bankbescheinigung ausgestellt.

§ 3

(1) Für nichtverbrauchte Markbeträge kann bei den damit beauftragten Geld- und Kreditinstituten sowie Einrichtungen der DDR gegen Vorlage der Bankbescheinigung — ein Rückkauf bis zur Höhe des erworbenen Markbetrages analog dem im § 2 Abs. 1 genannten Verhältnis, — eine Deponierung oder Einzahlung auf ein Devisenausländerkonto A erfolgen.

(2) Eine Ausfuhr von Mark der DDR ist zum Zwecke der Wiedereinfuhr bis zur Höhe der bei den Geld- und Kreditinstituten sowie Einrichtungen der DDR erworbenen Markbeträge möglich.

§ 4

Der Verkauf und Rückkauf von Mark der DDR erfolgt gebührenfrei.

§ 5

Diese Anordnung tritt am 1. Januar 1990 in Kraft.

Berlin, den 21. Dezember 1989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Nickel**

**Bekanntmachung
der zur nichtkommerziellen Einfuhr
zugelassenen Fahrzeugtypen
vom 20. Dezember 1989**

Auf Grund des § 9 Abs. 2 des Zollgesetzes vom 28. März 1962 (GBl. I Nr. 3 S. 42) in Verbindung mit § 2 Abs. 2 der Vierunddreißigsten Durchführungsbestimmung vom 3. November 1989 zum Zollgesetz — Genehmigungsverfahren für die nichtkommerzielle Ein- und Ausfuhr von Kraftfahrzeugen und Kraftfahrzeugersatzteilen — (GBl. I Nr. 22 S. 242) werden im Einvernehmen mit den Ministern für Verkehrswesen sowie für Maschinenbau die zur nichtkommerziellen Einfuhr i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zugelassenen Fahrzeugtypen bekanntgemacht.

1. Die nachstehend genannten Fahrzeugtypen sind zur nichtkommerziellen Einfuhr in die DDR zugelassen:

Fahrzeugtyp	Kategorie gemäß Genehmigungsgebühren- ordnung*
-------------	--

Wartburg	I
Trabant	I
Barkas	I
Skoda	I
Dacia	I
Oltecit	I
Lada WAS 2109	II
Lada Niva	II
Lada WAS (alle übrigen Typen)	I
Saporoshez	I
Moskwitsch	I
Wolga	I
Zastawa	I
Polski FIAT	II
FIAT 126	II
FIAT Panda	II
FIAT Tipo	II
FIAT Regata	II
FIAT Croma	II
Citroen AX	II
Citroen BX	II
Mazda 323	II
Mazda 626	II
Peugeot 205	II
Peugeot 305	II
Toyota Corola	II
Renault 5	II
Renault 9	II
Renault 11	II
Renault 19	II

*Z. Z. gilt die Anordnung vom 12. Dezember 1988 über die Erhebung von Gebühren für die Erteilung von Genehmigungen zur Aus- und Einfuhr von Gegenständen im grenzüberschreitenden Reiseverkehr — Genehmigungsgebührenordnung — (GBl. II Nr. 132 S. 1053) in der Fassung der Anordnung Nr. 3 vom 24. Juni 1971 (GBl. II Nr. 54 S. 481), der Anordnung Nr. 4 vom 6. Oktober 1987 (GBl. I Nr. 25 S. 243), der Anordnung Nr. 5 vom 27. Januar 1989 (GBl. I Nr. 4 S. 87), der Anordnung Nr. 6 vom 3. November 1989 (GBl. I Nr. 22 S. 246) und der Anordnung Nr. 7 vom 12. Dezember 1989 (GBl. I Nr. 26 S. 228).

문서 번호 10

동독 중앙은행의 외환구좌 개설에 관한 법

1989 년 12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물가관리부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중앙은행에 외환구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 외환구좌법이다. 이 법에 따라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관 사업체 모두 외환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구좌는 도이치마르크로 운영된다. 이 구좌에서는 다른 외환으로 입출금할 수 있다. 구좌 예치금에 대한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좌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구좌가 양도된다.

출처: DDR-Gesetzblatt 1989 I/26, 276

— Bürger anderer Staaten und Staatenlose mit ständigem Wohnsitz in der DDR,
die nach den devisenrechtlichen Bestimmungen Devisenländer sind.

§ 2

(1) Die im § 1 genannten Personen sind berechtigt, im Jahre 1990 Reisezahlungsmittel für private Reisen in folgender Höhe zu erwerben:

1. Währungen der anderen Mitgliedsländer des RGW in unbegrenzter Höhe (außer der Ungarischen Republik),
2. konvertierbare Devisen bis zur Höhe von 200 DM.

(2) Der Umtauschsatz gemäß Abs. 1 Ziff. 2 beträgt für Kinder bis zum vollendeten 14. Lebensjahr 50 % des genannten Betrages.

§ 3

(1) Die im § 2 Abs. 1 Ziff. 1 genannten Reisezahlungsmittel der Währungen der Mitgliedsländer des RGW werden zu den jeweils gültigen Devisenumrechnungssätzen und einer Bearbeitungsgebühr gemäß Gebührenordnung der Staatsbank der DDR in Höhe von 2 % verkauft.

(2) Die im § 2 Abs. 1 Ziff. 2 genannten Reisezahlungsmittel konvertierbarer Devisen werden

- a) im Gegenwert bis zu 100 DM im Verhältnis
1 DM = 1 Mark der DDR und für andere konvertierbare Währungen zum für diese Währungen gültigen Devisenumrechnungssatz,
- b) über einen Gegenwert von 100 DM hinaus mit einem Aufschlag zum gültigen Devisenumrechnungssatz von 400 %
(d. h. — 1 DM = 1 Mark der DDR + 4 Mark Aufschlag = 5 Mark
— für andere konvertierbare Währungen = Devisenumrechnungssatz + 400 % Aufschlag)

verkauft.

(3) Für Kinder bis zum vollendeten 14. Lebensjahr gilt für Buchst. a bis 50 DM und Buchst. b über 50 DM.

§ 4

(1) Die im § 2 genannten Reisezahlungsmittel können in der DDR bei den Filialen und Wechselstellen der Staatsbank der DDR und bei den von der Staatsbank der DDR damit beauftragten Geld- und Kreditinstituten oder Einrichtungen erworben werden.

(2) Die entsprechenden Kreditinstitute und Einrichtungen, ihre Öffnungszeiten und der Verkaufsmodus sind in geeigneter Weise durch die Kreisfilialdirektoren der Staatsbank der DDR für das jeweilige Territorium zu veröffentlichen.

(3) Bürger der DDR können konvertierbare Devisen gemäß § 2 Abs. 1 Ziff. 2 und Abs. 2 auch bei den damit beauftragten Einricht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Berlin (West) erwerben. Sie sind berechtigt, die dazu erforderlichen Beträge in Mark der DDR auszuführen.

(4) Bürger anderer Staaten und Staatenlose mit ständigem Wohnsitz in der DDR können Reisezahlungsmittel nur bei der für ihren Wohnsitz zuständigen Kreisfiliale der Staatsbank der DDR erwerben.

§ 5

(1) Der Verkauf von Reisezahlungsmitteln gemäß § 2 Abs. 1 Ziff. 2 und Abs. 2 wird

- für DDR-Bürger ab vollendetem 14. Lebensjahr im Personalausweis,
 - für Staatenlose und Ausländer ab vollendetem 14. Lebensjahr in der Aufenthaltserlaubnis,
 - für Kinder bis zum vollendeten 14. Lebensjahr im Sozialversicherungs- und Impfausweis
- vermerkt.

(2) Ein Verkauf von Reisezahlungsmitteln für Kinder erfolgt nur, wenn neben dem Sozialversicherungs- und Impfausweis des Kindes ein Personaldokument gemäß Abs. 1 eines Erziehungsberechtigten vorgelegt wird.

§ 6

In den Reiseländern nicht verbrauchte Reisezahlungsmittel gemäß § 2 Abs. 1 Ziff. 1 können der Staatsbank der DDR zum Ankauf angeboten werden. Der Ankauf erfolgt zu dem am Tage des Ankaufs gültigen Devisenumrechnungssatz.

§ 7

Für im Jahre 1990 ausgestellte Ersatzdokumente für Personalausweise, Aufenthaltserlaubnisse sowie Sozialversicherungs- und Impfausweise wird der Geldumtausch in den für den Wohnsitz des Antragstellers zuständigen Kreisfilialen der Staatsbank der DDR nach Prüfung der Umtauschberechtigung durchgeführt.

§ 8

Die unberechtigte Inanspruchnahme der Ankaufmöglichkeiten führt zum Verlust des Anspruchs auf Ankauf von Reisezahlungsmitteln für das Folgejahr bzw. für die Folgejahre, sofern nicht die Rückzahlung des unberechtigt erlangten Betrages erfolgt.

§ 9

Diese Anordnung tritt am 1. Januar 1990 in Kraft.

Berlin, den 21. Dezember 1989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Nickel**

**Anordnung
über die Führung von Valutakonten
bei der Staatsbank der DDR
vom 21. Dezember 1989**

Auf der Grundlage der §§ 7 Abs. 2 und 11 Abs. 3 des Devisengesetzes vom 19. Dezember 1973 (GBl. I Nr. 58 S. 574) wird im Einvernehmen mit dem Präsidenten der Staatsbank der DDR folgendes angeordnet:

§ 1

Diese Anordnung gilt für

- Personen mit Wohnsitz oder ständigem Aufenthalt in der DDR,
- Organe und Einrichtungen, Genossenschaften, Vereinigungen, Gesellschaften, Parteien und gesellschaftliche Organisationen, deren Sitz oder Ort der Geschäftsleitung sich in der DDR befindet.

§ 2

Die im § 1 Genannten können bei der für ihren Wohnsitz, Sitz bzw. Ort der Geschäftsleitung zuständigen Filiale der Staatsbank der DDR Valutakonten führen.

§ 3

(1) Auf Valutakonten können im Rahmen der devisenrechtlichen Regelungen erworbene Zahlungsmittel konvertierbarer Währungen gutgeschrieben werden.

(2) Die Valutakonten werden in D-Mark geführt.

(3) Die Verzinsung beträgt

- bei täglich fälligen Guthaben 2,5 % pro Jahr,
- bei Guthaben mit einer Kündigungsfrist von einem Jahr 4 % pro Jahr.

Wird über langfristig angelegte Guthaben in Ausnahmefällen nach Abstimmung mit der Staatsbank der DDR ohne Einhaltung der Kündigungsfrist verfügt, wird der vorfristig verfügte Betrag für die Dauer der unter einem Jahr liegenden Anlage mit 2 % pro Jahr verzinst.

§ 4

Inhaber von Valutakonten können über das Kontoguthaben uneingeschränkt verfügen.

§ 5

Gutschriften zugunsten und Verfügungen zu Lasten des Valutakontos in anderen konvertierbaren Währungen außer D-Mark erfolgen zu den von der Staatsbank der DDR festgelegten Tageskursen für den nichtkommerziellen Zahlungsverkehr.

§ 6

Gehen Rechte an Valutakonten kraft gesetzlicher oder testamentarischer Erbfolge auf Erben oder Vermächtnisnehmer mit Wohnsitz, ständigem Aufenthalt oder Sitz im Ausland über, kann durch diese über das Valutakonto gemäß § 4 dieser Anordnung verfügt werden.

§ 7

Der Präsident der Staatsbank der DDR legt die zur Durchführung dieser Anordnung erforderlichen Bedingungen für die Kontoführung sowie die Grundsätze für die Abwicklung der Zahlungen fest und informiert hierüber die Kontoinhaber.

§ 8

(1) Diese Anordnung tritt am 1. Januar 1990 in Kraft.

(2) Sie findet Anwendung auf alle zu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er Anordnung bestehenden Valutaanrechtskonten und die dazu abgeschlossenen Kontoverträge. Die bestehenden Valutaanrechtskonten werden als täglich fällige Einlagen behandelt. Einlagen mit Kündigungsfrist bedürfen neuer Vereinbarungen des Kontoinhabers mit der Staatsbank der DDR.

Berlin, den 21. Dezember 1989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Nickel**

Anordnung

**über den Erwerb von Mark der DDR durch Bürger
mit ständigem Wohnsitz im Ausland bei Aufenthalt
in der DDR im Jahre 1990**

vom 21. Dezember 1989

Im Einvernehmen mit dem Präsidenten der Staatsbank der DDR wird folgendes angeordnet:

§ 1

Diese Anordnung gilt für den Erwerb von Mark der DDR durch Bürger mit ständigem Wohnsitz im Ausland anlässlich von Aufenthalten in der DDR bei den damit beauftragten Geld- und Kreditinstituten sowie Einrichtungen der DDR.

§ 2

(1) Die im § 1 genannten Bürger können Mark der DDR gegen DM im Verhältnis

1 DM = 3 Mark der DDR ankaufen.

(2) Über den gemäß Abs. 1 erworbenen Markbetrag wird eine Bankbescheinigung ausgestellt.

§ 3

(1) Für nichtverbrauchte Markbeträge kann bei den damit beauftragten Geld- und Kreditinstituten sowie Einrichtungen der DDR gegen Vorlage der Bankbescheinigung — ein Rückkauf bis zur Höhe des erworbenen Markbetrages analog dem im § 2 Abs. 1 genannten Verhältnis, — eine Deponierung oder Einzahlung auf ein Devisenausländerkonto A erfolgen.

(2) Eine Ausfuhr von Mark der DDR ist zum Zwecke der Wiedereinfuhr bis zur Höhe der bei den Geld- und Kreditinstituten sowie Einrichtungen der DDR erworbenen Markbeträge möglich.

§ 4

Der Verkauf und Rückkauf von Mark der DDR erfolgt gebührenfrei.

§ 5

Diese Anordnung tritt am 1. Januar 1990 in Kraft.

Berlin, den 21. Dezember 1989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Nickel**

**Bekanntmachung
der zur nichtkommerziellen Einfuhr
zugelassenen Fahrzeugtypen
vom 20. Dezember 1989**

Auf Grund des § 9 Abs. 2 des Zollgesetzes vom 28. März 1962 (GBl. I Nr. 3 S. 42) in Verbindung mit § 2 Abs. 2 der Vierunddreißigsten Durchführungsbestimmung vom 3. November 1989 zum Zollgesetz — Genehmigungsverfahren für die nichtkommerzielle Ein- und Ausfuhr von Kraftfahrzeugen und Kraftfahrzeugersatzteilen — (GBl. I Nr. 22 S. 242) werden im Einvernehmen mit den Ministern für Verkehrswesen sowie für Maschinenbau die zur nichtkommerziellen Einfuhr i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zugelassenen Fahrzeugtypen bekanntgemacht.

1. Die nachstehend genannten Fahrzeugtypen sind zur nichtkommerziellen Einfuhr in die DDR zugelassen:

Fahrzeugtyp	Kategorie gemäß Genehmigungsgebühren- ordnung*
Wartburg	I
Trabant	I
Barkas	I
Skoda	I
Dacia	I
Oltecit	I
Lada WAS 2109	II
Lada Niva	II
Lada WAS (alle übrigen Typen)	I
Saporoshez	I
Moskwitsch	I
Wolga	I
Zastawa	I
Polski FIAT	II
FIAT 126	II
FIAT Panda	II
FIAT Tipo	II
FIAT Regata	II
FIAT Croma	II
Citroen AX	II
Citroen BX	II
Mazda 323	II
Mazda 626	II
Peugeot 205	II
Peugeot 305	II
Toyota Corola	II
Renault 5	II
Renault 9	II
Renault 11	II
Renault 19	II

*Z. Z. gilt die Anordnung vom 12. Dezember 1988 über die Erhebung von Gebühren für die Erteilung von Genehmigungen zur Ausfuhr und Einfuhr von Gegenständen im grenzüberschreitenden Reiseverkehr — Genehmigungsgebührenordnung — (GBl. II Nr. 132 S. 1063) in der Fassung der Anordnung Nr. 3 vom 24. Juni 1971 (GBl. II Nr. 54 S. 481), der Anordnung Nr. 4 vom 6. Oktober 1987 (GBl. I Nr. 25 S. 243), der Anordnung Nr. 5 vom 27. Januar 1989 (GBl. I Nr. 4 S. 87), der Anordnung Nr. 6 vom 3. November 1989 (GBl. I Nr. 22 S. 246) und der Anordnung Nr. 7 vom 12. Dezember 1989 (GBl. I Nr. 26 S. 228).

문서 번호 11

DM 개시 대차대조표(DM-Eröffnungsbilanz)의 소유지(토지)에 관한 임시 평가 방침

1990 년

담당자 / 기관: 연방재무부

내용: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 및 경제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에 포함된 소유지(토지)의 평가 및 즉각적인 DM 개시 대차대조표의 재산평가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재무부에서 임시적인 평가를 위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출처: 연방재무부, 1990 년

(BMF, 1990)

Arbeitsrichtlinie

zur vorläufigen Bewertung von Grund und Boden
in der DM - Eröffnungsbilanz

Zur Durchführung der im Staats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Anlage I, Artikel 7, § 3; Anlage IX) enthaltenen Aufgaben zur Bewertung von Grund und Boden und zur unverzüglichen Vermögensbewertung für die DM-Eröffnungsbilanz ist es notwendig, daß die Betriebe und territorialen Einrichtungen über Kriterien zur Bewertung von Grund und Boden verfügen.

Da volkseigener Grund und Boden bisher in der DDR nicht gehandelt wurde, hat sich auch kein aktueller Wert eingestellt. Die letzte Erfassung des Grund und Bodens geht auf das Jahr 1935 zurück, wonach die Wertgrößen zwischen 1,00 Mark bis 100,00 Mark je m² liegen. Demgegenüber betragen die aktuellen Kaufpreise für baufreies Land in der BRD je nach Orts- und Geschäftslage zwischen 50,00 DM und ca. 8.000,00 DM je m². Aus dieser Spannweite ist zu ersehen, daß eine sofortige, den gegenwärtigen Bedingungen entsprechende Berechnung von Grund und Boden nicht möglich ist, sondern daß sich der aktuelle Marktwert marktwirtschaftlich je nach Angebot und Nachfrage einstellen wird.

Die Problematik des Nachweises des Eigentums an Grund und Boden wird dabei in diesem Rahmen nicht berücksichtigt. Die Bewertung von Grund und Boden hat erhebliche Bedeutung bei der

- Berechnung der Grund- und Vermögenssteuer
- Berechnung von Pacht, Nutzungsgebühr und Zinsen

- Bewertung der Sacheinlagen bei der Bild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einschließlich Joint Ventures
- Bewertung der Kreditwürdigkeit einer Kapitalgesellschaft (der Wert von Grund und Boden kann als Sicherheit für aufzunehmende Kredite eingesetzt werden)
- Emission von Wertpapieren und bei der
- Erarbeitung der Eröffnungsbilanz in DM.

Bei der vorliegenden Arbeitsrichtlinie zur vorläufigen Bewertung von Grund und Boden in der D-Mark-Eröffnungsbilanz wird davon ausgegangen, daß keine staatliche Bestätigung von Kaufpreisen erfolgt und daß die Orientierungsgrößen Unternehmen unter Zuhilfenahme von zugelassenen Sachverständigen durchgeführt wird. Mit den entsprechend dieser Arbeitsrichtlinie berechneten Orientierungsgrößen für den Wert von Grund und Boden kann der marktwirtschaftliche Verkehr mit Grund und Boden eröffnet werden.

Das Verfahren wurde i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erarbeitet und mit den Ministerien für Finanzen, für Bauwesen, Städtebau und Wohnungswirtschaft, des Inneren und dem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 und Forstwirtschaft abgestimmt. Darüber hinaus hat mit Vertreter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Raumordnung, Bauwesen und Städtebau,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und mit Sachverständigen eine Fachinformationstagung zum Entwurf der Arbeitsrichtlinie stattgefunden. Da dieses Verfahren auf der Grundlage des Vergleichswertverfahrens basiert, wurde dem vorgelegten Entwurf prinzipiell zugestimmt. Es wird jedoch ausdrücklich darauf verwiesen, daß mit diesem Verfahren keine staatliche Vorgabe von Preisen für Grund und Boden verbunden werden darf.

Teil I - Grundsätze

1. Diese Arbeitsorientierung gilt für die Bewertung von Grund und Boden der Unternehmen zur Aufstellung der DM-Eröffnungsbilanz, soweit ein aktueller Verkehrswert noch nicht ermittelt werden konnte und ihre Anwendung durch anderslautende staatliche Festlegungen nicht eingeschränkt wird. Die Orientierung gilt nicht für die Bewertung von Lagerstätten. Sie ist durch die Unternehmen eigenverantwortlich und unter Beachtung der vor Ort bestehenden Bedingungen anzuwenden. Der nach dieser Orientierung ermittelte Wertansatz kann bei der Aufstellung späterer Jahresabschlüsse korrigiert werden, wenn sich in den Folgejahren ein abweichender Verkehrswert einstellt.
2. Das Verfahren wurde erarbeitet unter Beachtung der Prinzipien des Handelsgesetzbuches zur kaufmännischen Vorsicht. Die Wertermittlung erfolgt entsprechend dem Vergleichswertverfahren mit Ausgangsdaten der BRD unter Berücksichtigung der Länderstruktur, der Gemeindegrößenklasse, der Geschäftslage usw.
3. Ausgangswert für das Gebiet der DDR ist der Durchschnittswert der BRD der Jahre 1985 - 1989 in Höhe von 85 DM/m². Dieser Wert wurde entsprechend dem Niedrigstwertprinzip angesetzt. Im Vergleich dazu beträgt der aktuelle Kaufwert 1990 in der BRD durchschnittlich 97 DM/m².
4. Die Berechnung der Werte von Grund und Boden erfolgt ausgehend vom durchschnittlichen Verkehrswert durch Multiplikation mit Koeffizienten um die
 - Territorialstruktur nach Ländern (0,6 - 1,5)
 - Baulandarten (0,4 - 1,5)
 - Gemeindegrößenklasse (0,4 - 3,5)
 - Geschäfts- bzw. Industrielage (0,5 - 2,5)

- Erschließung und Infrastruktur (0,5 - 1,25) sowie
- spezielle Wertmerkmale zur Ab- bzw. Aufwertung (0,3 - 1,5)

für die spezifischen Standortbedingungen zu berücksichtigen. Dabei sind die Koeffizienten eigenverantwortlich, entsprechend den konkreten Bedingungen vor Ort, festzulegen.

5. Landwirtschaftlich genutzter Boden wird nach der Bodenwertzahl (Ertragsmeßzahl) bewertet.

Die Bewertung erfolgt, indem die Ertragsmeßzahl je Hektar mit einem durchschnittlichen Orientierungswert von 150 D-Mark multipliziert wird.

Beispiel:

Ertragsmeßzahl/ha	Bodenpreis/ha - DM -
-------------------	-------------------------

20	3.000,00
40	6.000,00
60	9.000,00
80	12.000,00

Ist der Verkauf des Bodens als baureifes Land, Rohbauland oder sonstiges Bauland vorgesehen, erfolgt die Berechnung der Werte von Grund und Boden entsprechend der Punkte 3 und 4 der vorliegenden Grundsätze.

6. Für nicht landwirtschaftlich genutzten Boden (Forstwirtschaft, sonstiges Land) erfolgt die Bewertung entsprechend Punkt 5.

7. Die ermittelten Werte für Grund und Boden sind auch Basis für die Kapitalisierung der Nutzungsrechte.

8. Die weitere Arbeit mit Grund- und Bodenwerten sollte bereits jetzt für die DDR entsprechend Bundesgesetzblatt Teil I, Nr. 56 vom 13. Dezember 1988 "Verordnung über Grundsätze für die Ermittlung der Verkehrswerte von Grundstücken" (Wertermittlungsverordnung) oder einem entsprechenden, noch in Ausarbeitung befindlichen Baugesetz der DDR erfolgen. Die Erfassung der Kaufhandlungen, die statistische Aufbereitung der realen Werte und Karten erfolgt durch die Geschäftsstellen der Gutachterausschüsse, die beim Liegenschaftsamt eingerichtet werden.

9. Für die Beratung und Begutachtung sowie für die Bewertung von Grund und Boden wurden die zugelassenen Sachverständigen und die Gutachterausschüsse für Wertermittlungen im Grundstücksverkehr sowie die Investitions-Consult GmbH Berlin autorisiert.

문서 번호 12

동독의 화폐와 경제문제에 관한 전문가 초청 연방정부 간담회

1990 년 1 월 9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수상청, 수상청장 자이터스, 경제부 차관 폰 뷰어젠, 재무차관 쾰러, 노동사회부 차관 테트마이어, 수상청 루데비히국장 듀이스부르크국장, 연방은행 부총재 슐레징거, 드레스덴 은행 이사회 대변인 쾰러, 전국상공회의소 대표 기제커 와 다수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 수상청장 자이터스와 경제관련부처 차관들이 동독의 경제적 발전에 관해 평가하기 위해 서독의 경제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 참가자들이 먼저 동독에서 시장경제적 개혁이 얼마나 진행되었나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당시 개혁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늦고 덜 광범위하고 철저하지 못하게“ 그리고 „본질적이지 못하게 예외규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90 년 당시 연방정부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는 (그는 재무차관에서 물러난 후 세계은행 총재직을 역임하고 연방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런 원인은 동독 지도부가 „가능하면 적은 규모에서 개혁을 실천하고 서독으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나아가 동독의 반체제그룹 중에서 경제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방식의 태도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보았다.

동독의 개혁 중에서도 특히 투자보호협정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난받았다. 이 협정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투자의지를 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투자한도가 전체 자본규모의 49%이며, 조인트벤처 사업의 경우 민간 파트너를 갖는 것이 금지된 것과 같은 점들이 그 예로 지적되었다.

나아가 동독 재무체계에 관한 정부가 부족하며 시장경제적 개혁 이후 기초식량에 대한 가격통제가 해제되면 재무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 할 수 없는 동독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Referat 421

Bonn, den 15. Januar 1990

421 - 350 06 - De 13

Dr. Westerhoff (2422)

Über

Herrn Gruppenleiter 42

Herrn Abteilungsleiter 4

Herr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Z. Vorgang D. 37

Betr.: Informelles Gespräch über Wirtschafts- und Währungsfragen der DDR am 09.01.1990

Beginn: 16.00 Uhr, Ende: 18.30 Uhr

Teilnehmer: Chef BK Seiters, Prof. Dr. Schlesinger, Dr. Rölller, Prof. Dr. Schneider, Dr. Walter, Dr. Gieseke, Sts Dr. von Würzen, Sts Dr. Köhler, Sts Dr. Tegtmeier, Dr. Grimm, Dr. Duisberg, Dr. Ludewig, Dr. Homann, Dr. Schnurr, Dr. Westerhoff

Hier: Ergebnisvermerk

Chef BK Seiters eröffnet die Sitzung. Er stellt den Stand der Verhandlungen mit der DDR in aller Kürze dar. Er gibt das Wort an Sts Dr. von Würzen als dem zuständigen Ressortvertreter.

Sts Dr. von Würzen (BMWi) Nach seiner Beobachtung stellen sich die zunächst recht umfassend angekündigten Reformen in der DDR heute im Lichte erster Konkretisierungsschritte sehr viel weniger weitgehend, durchgreifend und schnell dar. Vieles solle heute nicht mehr grundsätzlich geregelt werden sondern über Ausnahmeregelungen. Dies zeige sich insbesondere am derzeit diskutierten Investitionsschutzabkommen, das zahlreiche Klauseln enthält, die westdeutsche Direktinvestitionen nicht fördern sondern erschweren. Er weist sodann darauf hin, daß mögliche Joint Venture mit der DDR zwar neben vielen anderen Maßnahmen (z.B. Reform des Bankensektors) wichtig seien, daß im Zentrum der Reformbemühungen jedoch die Herstellung der Gewerbefreiheit stehen müsse. Hier gelte es die vielfältigen bestehenden diskriminierenden Regelungen zu beseitigen. Schließlich wies er auf das offensichtliche Mißverhältnis zwischen der in unserer

...

Wirtschaft zu beobachtenden optimistischen Stimmung bezüglich der Chancen in der DDR und den unzureichenden Reformbemühungen durch die SED hin. Sts Dr. von Würzen erklärte dies mit der Fülle der bereits heute bestehenden Kooperationsmöglichkeiten mit DDR-Unternehmen auf der Ebene unterhalb von Joint-Ventures.

Prof. Dr. Schlesinger (BB) wies darauf hin, daß wir zu wenig wissen über die Geld- und Kreditwirtschaft in der DDR. So fehle es z.B. an einer Bilanz der Notenbank und es gebe keine Bankenstatistik. Allerdings beurteilte er das in den Medien intensiv behandelte Problem des Geldüberhangs in der DDR als überpointiert. Er wies vor allem darauf hin, daß die beträchtlichen Sparkonten der DDR-Bürger auch dadurch zu erklären seien, daß sie die einzige Form der Geldanlage in der DDR darstellen. Für ihn ist weniger der Geldüberhang eine Quelle möglicher inflationärer Prozesse als vielmehr der notwendige Subventionsabbau. Wenn nämlich die Subventionen auf Grundnahrungsmittel und Mieten abgebaut werden, wird es zu Preissteigerungen kommen, die man vermutlich durch Lohn- und Rentensteigerungen zu kompensieren versucht. Dies kann der Einstieg in einen inflationären Prozeß sein, der wegen eines fehlenden geldpolitischen Instrumentariums nicht zu beherrschen sein wird.

Zum zweiten wies er darauf hin, daß es derzeit schon fünf unterschiedliche Wechselkurse mit der DDR-Mark gebe: 1:1 und 1:5 im Devisenfonds; 1:3 im privaten Reiseverkehr; 1:4,4 und der Kurs, der sich beim freien Tausch bildet. Die Auslandsverschuldung der DDR bezifferte er netto auf zehn Mrd Dollar zuzüglich fünf Mrd DM gegenüber der Bundesrepublik. Insgesamt sei dies im Vergleich zu anderen Reformstaaten des Ostens eine geringe Verschuldung. Wenn er einen Rat an die DDR geben sollte, würde er empfehlen, mit einem offiziellen Wechselkurs 1:5 zu beginnen, um dann in gewissen Zeitabständen aufzuwerten. Dies würde nämlich den Wirtschaftssubjekten in der DDR eine Perspektive eröffnen, weil eine Aufwertung als Erfolg gewertet würde. Er vermutete jedoch, daß die Chance gering ist, daß die DDR diesen Weg geht. Im übrigen fehlten ihm jegliche Informationen darüber, daß die DDR zum jetzigen Zeitpunkt überhaupt durchgreifende Änderungen im Geld- und Kreditwesen planen würde.

Dr. Rölller (Dresdner Bank), berichtete zunächst über die Informationsstelle der Dresdner Bank in Dresden. Er wertete diese Aktion bereits heute als einen vollen Erfolg. Am 1. Januar habe man mit zwei Personen in dem Büro begonnen, heute seien es bereits neun. In den nächsten Wochen seien in anderen DDR-Städten weitere Informationsstellen geplant.

...

Nach seinen Beobachtungen fehlt es im Grundsatz nicht an Konzeptionen für eine Umstrukturierung der DDR-Wirtschaft. Was fehlt, sind Personen, die gewillt und in der Lage sind, diese umzusetzen. Er nannte als Beispiel das in der Konzeption halbherzig angelegte Investitionsschutzabkommen. Dieses Abkommen sei die Nagelprobe des Reformwillens. Von der Konzeption dieses Abkommens könne man schließen auf die Reformbereitschaft in anderen Bereichen, wie z.B. der Eigentumsordnung, der Lieferbeziehungen usw.. Darüber hinaus seien die Direktinvestitionen insofern von hoher Bedeutung, weil sie die Chance bieten, mit den Personen vorrangig in Kontakt zu treten, die an einer Wirtschaftsreform wirklich interessiert sind (der Wille zu Reformen sei im übrigen um so stärker, je weiter man sich von Ost-Berlin entferne und sich in der SED-Hierarchie nach unten bewege).

Er wies dann auf ein prinzipielles Problem in der DDR hin: In vierzig Jahren SED-Herrschaft habe sich nämlich die Denkgewohnheit herausgebildet, daß alles vom Staat kommen müsse. Und auch bei Gesprächen über bundesdeutsche Hilfen verfestigt sich der Eindruck, daß damit stets Staatsgelder gemeint seien. In Wirklichkeit könnten Hilfen bei der Reparatur der Infrastruktur und staatliche Hilfen stets nur Initialzündungen für privates Kapital aus der Bundesrepublik sein.

Herr Röllner erwartet, daß sich aus mehreren Gründen in der DDR die DM als Parallelwährung etablieren wird. Und auch hier wird es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sein, wie sich die DDR-Führung verhält, ob sie die Parallelwährung zuläßt oder sie versucht, die DM durch vielfältige Möglichkeiten abzuschöpfen.

Zusammenfassend glaubt er, daß die notwendigen wirtschaftspolitischen Maßnahmen in der DDR von den führenden Leuten noch nicht akzeptiert seien, und derzeit sei offenbar das Ziel der SED, nach dem 06. Mai koalitionsfähig zu bleiben. Da viele der notwendigen Maßnahmen im wirtschaftlichen und vor allem im sozialen Bereich schmerzhaft sein werden, glaubt er, daß bis zur Wahl keine dieser Maßnahmen ergriffen werden (Dr. Walter bestätigte diese Position).

Prof. Dr. Schneider sah das Hauptproblem der DDR in der Spannung zwischen der Größe der notwendigen Reformvorhaben und der politisch bestimmten kurzen Zeit.

In das Zentrum der Reformbemühungen in der DDR müßte nicht nur eine Preisreform gestellt werden, sondern eine ganze Reform des Preisbildungssystems. Das heißt mit anderen Worten, es muß eine Wettbewerbswirtschaft geschaffen werden. Dies

...

wiederum setzt die Zerschlagung der horizontalen Kombinate voraus. Denn diese beherrschen teilweise bis zu 80 % des jeweiligen DDR-Inlandsmarktes. Mit diesem Problem hänge auch eng das Stichwort "Ausverkauf" zusammen. Denn dieser könne nur geschehen, solange die Preise nicht ihre Funktion als Wertmesser wahrnehmen könnten. Im übrigen gebe es kein Muster für die Transformation ein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in eine Marktwirtschaft. Das Experiment China sei vor allem wegen des Hauptproblems Inflation auf halbem Wege stecken geblieben.

Sts Dr. Tegtmeier (BMA) wies noch einmal auf den Übersiedlungsdruck hin, der unvermindert andauere und machte auf einige mögliche Konsequenzen aufmerksam:

In der DDR betrage eine durchschnittliche Rente zwischen 400 und 500 DDR-Mark p.M.. Würde eine Preisreform bei gleichbleibenden Renten stattfinden, würde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auch die Anzahl der Übersiedler wieder steigen. Bei uns bekommt ein "Durchschnitts"-Rentner etwa 20.000 DM p. a., das bedeutet, bei 100.000 Übersiedlern im Rentenalter zwei Mrd DM. Mehrbelastung der Rentenversicherungen.

In den bisherigen Verhandlungen mit der DDR-Führung wollte diese bisher jedoch nur Amtshilfe bei der Verhinderung von Arbeitsaufnahme von DDR-Bürgern bei uns haben. Über andere Sachverhalte ist bisher nicht gesprochen worden. Andererseits steigen mittlerweile Anfragen aus der DDR über die Rentenhöhe und eine mögliche Arbeitsaufnahme bei uns.

Chef BK Seiters zog eine Zwischenbilanz der Diskussion und stellte die Frage, was zu tun sei, wenn die Stagnation im politischen Reformprozeß andauere.

Herr Dr. Gieseke (DIHT) erläuterte die Konzeption des geplanten DIHT-Kongresses in Berlin. Dazu lägen bereits viele Anfragen aus der DDR vor. Er äußerte die Besorgnis, daß die DDR-Führung ein großes propagandistisches "Getöse" bei einem nicht funktionierenden Investitionsschutzabkommen veranstalten werde, um mit Hinweis auf die Erfolglosigkeit solcher Maßnahmen weitere Wirtschaftsreformen abzublocken.

...

Er sah es als besonders vordringlich an, in den Oppositionsgruppen die wirtschaftspolitisch Verantwortlichen ausfindig zu machen, um über diese einen entsprechenden Druck auf die offizielle Wirtschaftspolitik ausüben zu können. Hieran fehle es ganz besonders. In diesem Punkt wurde er ausdrücklich von Dr. Rölller unterstützt. Sts Dr. Tegtmeier fragt später zu diesem Fragenkomplex, ob es überhaupt Gruppen gebe, die ein halbwegs geschlossenes Marktwirtschaftskonzept kennen und vertreten wollen.

Dr. Gieseke betonte noch einmal die Initialwirkung von Direktinvestitionen und nannte den engen Kontakt mit reformwilligen Kräften in der DDR den Transmissionsriemen für Reformen.

Sts Dr. von Würzen wies darauf hin, daß die ideologische Auseinandersetzung in der DDR noch nicht ausgestanden sei und daß sich hier auch wichtige Aufgaben für die Stiftungen unserer Parteien mit ihren Apparaten ergeben. Bisher scheine durchgängige Position aller Gruppen in der DDR zu sein, daß man soziale Sicherheit erhalten und eine ökonomische Erneuerung der DDR durchführen wolle, darüber hinaus im übrigen auch noch eine effiziente Wirtschaft für notwendig erachte. Die Erkenntnis, daß man erst produzieren müsse, bevor man verteilen könne, habe sich noch nicht durchgesetzt.

Auch müsse man sich darauf einstellen, daß ein optimales Ergebnis in unserem Sinne bei den Reformen in der DDR nicht zu erreichen sei. Man müsse deshalb auch Szenarien erarbeiten über das, was möglich erscheint. Es werde voraussichtlich keine volle Preisreform geben (die wir nach 1945 auch nicht sofort durchgeführt haben). Es werde vermutlich auch keine völlige Investitionsfreiheit geben, was aber durch eine weitgehende Gewerbefreiheit geheilt werden könne. Auf mögliche Hilfen für die DDR-Zahlungsbilanz müsse man sich einstellen. Dr. Rölller meinte dazu später, auch wenn man nicht alles erreiche, was nötig wäre, so sammle die andere Seite auf jeden Fall Erfahrungen mit marktwirtschaftlichen Prozessen. Viele Unternehmer hätten bereits heute unterschriftsreife Kooperationsverträge mit DDR-Unternehmen in der Schublade. Im übrigen meinte er, sollte man nicht von Auflagen sprechen, sondern von der Durchsetzung von Erkenntnissen marktwirtschaftlicher Erfahrungen.

Sts Dr. Köhler (BMF) wies darauf hin, daß alle Probleme, die sich heute stellen - im Arbeitsmarktbereich, im Währungsbereich, im Technologiebereich usw. - Arbitrageprobleme seien. Im übrigen sollte man von unserer Seite auch manche

...

Prozesse einfach laufen lassen, wie z.B. bei den Wechselkursen. Hier würden sich von selbst Gleichgewichtssituationen ergeben. Das Ziel der derzeitigen DDR-Führung sei: möglichst wenig Reformen im eigenen Land bei möglichst viel Geld aus der Bundesrepublik.

Chef BK Seiters wies noch mal auf die objektiven Schwierigkeiten hin, die sich uns entgegenstellen. Die SED könne nämlich auf einen vierzig Jahre lang beherrschten Apparat zurückgreifen, der den Sozialismus will. Andererseits gebe es eine Opposition, die "keine Marktwirtschaft kann".

Prof. Dr. Schlesinger stellte zwei Probleme heraus. Zum einen enthalte das jetzt vorgelegte Investitionsschlußabkommen einige Fallen: Private Unternehmer sind bei den Joint-ventures ausgeschlossen; es bestehe eine Genehmigungspflicht; der Anteil ausländischen Kapitals dürfe 49 % nicht übersteigen; in den Preisbildungsprozeß könne eingegriffen werden; und über die mögliche Abführung von Devisen bestehe Unklarheit. Dies sei eher ein Modell der Investitionsabschreckung.

Zum zweiten wies er auf die bisher schon aufgelaufenen erheblichen Haushaltsbelastungen für Hilfen zugunsten von Polen, Ungarn und der DDR hin. Deshalb solle man sich nicht scheuen, auch in der politischen Sondersituation, in der wir uns gegenüber der DDR befinden, Auflagen zu verlangen. Er wies ausdrücklich auf Analogien zu IWF-Krediten hin.

Dr. Ludewig (BK) meinte, daß das Investitionsschutzabkommen vermutlich bis zum 06. Mai geregelt sei. Er stellt die Frage, was noch bis zum Wahltag hinzutreten müsse, z.B. im monetären Bereich. Denn immerhin sollen Schätzungen zufolge in diesem Jahr ca. 10 Milliarden DM privat in die DDR fließen.

Anknüpfend an diese Frage stellte Sts Dr. von Würzen noch einmal heraus, daß der Devisenzufluß ein wichtiges Problem sei, auch bei den Joint-ventures. Was geschehe z.B. mit Unternehmen, die nur für den Inlandsmarkt produzieren und keinen Zugang zu Devisen haben.

Dr. Westerhoff

문서 번호 13

10 개항 프로그램

1990 년 1 월 12 일

담당자 / 기관: 티로 자라친

내용:

이 문서는 독일 통일 당시 서독 연방정부 재무부의 국장으로 내독관계와 화폐경제통합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티로 자라친이 작성한 것으로 1994 년에 연방재무장관이었던 테오 바이겔이 발표한 독일통일에 대한 회고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 년 1 월 12 일 동독 재무부 및 재무부 산하 연구기관 해당 담당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서독 연방 재무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화폐, 재정 및 세제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 내용이 동독 방문단에게 전달되었다. 동독 지역에서는 이러한 세금 관리라든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 세무법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동독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독과 같은 세금 체제로 올바르게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수많은 직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시장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시급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지속적 개혁 과정에 대한 연관성 있는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방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화폐통합 문제 또한 함께 다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독 화폐통합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10 가지 항목의 단계적인 화폐통합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1. 가격 및 시장 개혁
2. 재정 및 세금 개혁
3. 대외 무역교류 자유화 및 국가의 독점적 무역활동 폐지
4. 외환의 인위적 제한 폐지 및 화폐 태환성 확보
5. 현실적인 환율 규정의 도입
6. 화폐 및 은행 시스템의 개혁
7. 화폐 공급의 엄격한 관리

8. 자본 형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 마련

9. 동독 시장에서의 환율 안정화

10. 화폐통합

출처: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 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p. 174-183

7. Das Zehn-Punkte-Programm

Nach dem Treffen zwischen dem Bundeskanzler und Ministerpräsident Modrow am 19. Dezember 1989 in Dresden war zwischen beiden Regierungen eine Fülle von Kontakten zur Verbesserung der Wirtschaftsbeziehungen angelaufen. Es wurde unter

anderem verhandelt über ein Investitionsschutzabkommen und über ERP-Kredite für mittelständische Unternehmen in der DDR. Nach einem Treffen von Minister Waigel mit der Ministerin für Finanzen und Preise, Frau Nickel, besuchte am 12. Januar 1990 erstmals eine Delegation des DDR-Finanzministeriums unter der Leitung von Prof. Lebig, des Leiters des Forschungsinstituts des Ministeriums (in unserer Diktion die Grundsatzabteilung), das Bundesfinanzministerium. Wir lernten erstmals einen Teil jener Gesprächspartner kennen, mit denen wir es in den folgenden Monaten fortlaufend zu tun haben würden. Wir gaben währungs-, finanz- und steuerpolitische Informationen und erhielten unsererseits alle Strukturinformationen, nach denen wir fragten. Besonders schockierend war für uns die Erkenntnis, daß eine Steuerverwaltung und damit verbreitete Steuerrechtskenntnisse in der DDR fast nicht existierten – ein entscheidendes Hemmnis bei allen Bemühungen um eine marktwirtschaftliche Unternehmens- und Finanzreform.

Es wurde mir an dieser Stelle erstmals klar, daß nur eine Übertragung ganzer Rechtsgebiete, verbunden mit erheblicher personeller Hilfe bei ihrer Umsetzung, schnelle Voraussetzungen für marktwirtschaftliche Reformen schaffen konnte.

Ferner wurde nicht nur bei diesem Treffen, sondern bei den unterschiedlichsten Gelegenheiten und aus öffentlichen Äußerungen der DDR-Führung deutlich, daß ein zusammenhängendes Konzept für den weiteren Reformkurs nicht bestand. Das Volk sollte befriedet werden, irgendwie sollte es auf einem noch unscharfen dritten Weg Richtung Marktwirtschaft und Demokratie gehen, und westliches Geld sollte verhindern, daß es zu einer politischen und sozialen Explosion kam. Das Skandalon der Rolle der Staatssicherheit nahm öffentliche Konturen an. Die Regierung Modrow wurde immer schwächer, die Aussiedlerzahlen strebten neuen Rekorden zu.

Für die Bundesregierung verschärfte sich der Druck, auf das gesamte Problemknäuel eine umfassende, sachlich fundierte und außenpolitisch akzeptable Antwort zu geben. Im Finanzministerium begann eine intensive interne Diskussion über ein schnell durchzuführendes stufenweises Reformprogramm mit einer

Währungsunion (zunächst zwei Währungen mit fixierten Kursen) als Endstufe. Aber das Stichwort »Währungsunion« blieb noch für einige Wochen ein amtliches Unwort, das nach außen nicht verwendet werden durfte, weil es politisch und ökonomisch zu riskant erschien.

In einem Vermerk für Minister Waigel vom 15. Januar 1990 hatte sich das Stufenprogramm für eine Währungsunion – jetzt unter ausdrücklicher Verknüpfung mit der aktuellen deutschlandpolitischen Entwicklung – wie folgt verdichtet:

»Zehn Punkte auf dem Weg zu einer deutsch-deutschen Währungsunion

Gegenwärtig ist

- der offizielle Umtauschkurs der DDR-Mark in D-Mark für West-Ost-Reisende 1:3,
- der Umtauschkurs im Reisedevisen-Fonds 1:1 für die ersten 100 DM und 1:5 für die zweiten 100 DM,
- der Banknoten-Kurs im Freiverkehr 1:8 bis 1:9,
- nach Angaben des DDR-Finanzministeriums das durchschnittliche Austauschverhältnis beim Handel mit dem Westen 1:4,4.

Dieser Zustand ist von befriedigenden Verhältnissen weit entfernt.

Währungen sind auch Symbole: Die D-Mark steht für den Erfolg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und den wirtschaftlichen Aufschwung unseres Landes.

Eine Währungsunion wäre ein Schritt zur Einheit Deutschlands. Aus dem Ziel einer Währungsunion leitet sich eine klare Wegweisung für die notwendigen Reformen ab. Denn eine Währungsunion setzt einen einheitlichen Wirtschaftsraum, einen gleichartigen Ordnungsrahmen, ähnliche wirtschaftspolitische Zielvorstellungen in der Ausgangslage, realistische Wechselkurse und eine gemeinsame Zentralbank voraus.

Die folgenden zehn Punkte weisen einen Weg, wie durch konsequente Reformen die Gesundung der DDR-Wirtschaft eingeleitet und schließlich eine deutsch-deutsche Währungsunion verwirklicht werden kann.

1. Preis- und Marktreform

Eine Preisreform mit weitgehender Beseitigung der Preissubventionen und stufenweiser Preisfreigabe ist einer der dringendsten Reformschritte. Die durch die Preissubventionen verursachte volkswirtschaftliche

Verschwendung wird so beseitigt, knappe Ressourcen werden sparsam und möglichst wohlfördernd verwendet. Die Preisreform muß ergänzt werden durch soziale Flankierungsmaßnahmen.

Mit der Preisreform muß die Einführung von Wettbewerb durch eine Marktreform verbunden sein: Durch Zerlegung der monopolistisch organisierten Kombinate, Gewerbefreiheit und unbeschränkte Zulassung privater Unternehmensgründungen, unbeschränkte Niederlassungsfreiheit auch für ausländische Unternehmen und Abschaffung aller Planauflagen werden wirtschaftliche Kräfte freigesetzt und die künftigen Angebotsmöglichkeiten vermehrt. (Die hohen ausländischen Kapitalbeteiligungen in den Anfangsjahren der Bundesrepublik haben erheblich zur wirtschaftlichen Wiedergesundung beigetragen.)

2. Finanz- und Steuerreform

Eng verzahnt mit der Preis- und Marktreform muß die Reform des gesamten Abgabewesens erfolgen: klare Trennung des privaten Produktionsbereichs von staatlichen Aufgabefeldern, Herausnahme der Unternehmensfinanzen aus dem Staatshaushalt, Einführung einer wirtschaftlichen Rechnungsführung, Schaffung solider Grundlagen für die Finanzierung des Staatshaushalts durch Einführung einer vernünftigen, international wettbewerbsfähigen Gewinnbesteuerung, einer leistungsgerechten Einkommensteuer und einer allgemeinen Umsatzsteuer.

3. Liberalisierung des Außenwirtschaftsverkehrs und Beseitigung des Außenhandelsmonopols

Wesentlicher Bestandteil der Marktreform muß die Liberalisierung des Außenwirtschaftsverkehrs sein, damit die Wirtschaft der DDR an der internationalen Arbeitsteilung voll teilnehmen kann.

Das Außenhandelsmonopol, das die Unternehmen von ihren ausländischen Märkten und Bezugsquellen abgeschnitten und zu unwirtschaftlichen Importen und zu unzureichenden Exporterfolgen geführt hat, muß beseitigt werden. Noch bestehende Beschränkungen der Ein- und Ausfuhr von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sollten möglichst rasch aufgehoben werden. Allerdings muß das Tempo der Liberalisierung des Außenwirtschaftsverkehrs im Einklang mit dem Voranschreiten der Markt- und Preisreform im Innern stehen. Denn sonst kommt es zu Verzerrungen: Die Ausfuhr von Produkten mit künstlich niedrig gehaltenen Preisen würde begünstigt (»Ausverkauf«), Hersteller von künstlich »zu teuren« Produkten verlieren ihre Wettbewerbsfähigkeit.

4. Aufhebung von Devisenbeschränkungen und Schritte zur Konvertibilität

Korrespondierend hierzu wären die bestehenden Devisenbeschränkungen schrittweise abzubauen. Für Transaktionen im Güter- und Dienstleistungsverkehr sollte es keine Zahlungsbeschränkungen geben.

Im Kapitalverkehr müssen die Beschränkungen wohl etwas langsamer abgebaut werden. Allerdings könnte ein rasches Voranschreiten bei der Liberalisierung des Kapitalverkehrs unter Umständen dazu beitragen, die Attraktivität der DDR für den Kapitalzustrom zu steigern. Auf jeden Fall sollte sichergestellt werden, daß Investitionen in der DDR aus der Bundesrepublik oder dem westlichen Ausland nicht behindert werden (was unter anderem Zusicherungen für den Rücktransfer von Gewinnen und Kapital bedeutet).

5. Einführung einer realistischen Wechselkursregelung

Die gegenwärtige Wechselkursvielfalt, die ein Ergebnis der Preisverzerrungen ist und zugleich neue Verzerrungen schafft, sollte möglichst bald einem einheitlichen, realistischen Wechselkurs Platz machen. Es dürfte zweckmäßig sein, sich diesem Zustand schrittweise zu nähern.

Ein erster Schritt ist die Legalisierung der Aus- und Einfuhr von Banknoten und des Umtauschs zu »Freiverkehrskursen« – innerhalb wie außerhalb der DDR.

Für den übrigen Zahlungsverkehr könnte vorübergehend – bis zur Herausbildung eines echten Devisenmarkts – ein staatlich veranstaltetes Devisen-Auktionssystem eingeführt werden: Die durch Exporte oder auf anderem Weg erwirtschafteten Devisen können von den jeweiligen Eigentümern auf zu veranstaltenden Auktionen angeboten und von Importeuren und anderen Personen beziehungsweise Unternehmen, welche Auslands-Zahlungsverpflichtungen zu erfüllen haben, ersteigert werden.

Ziel sollte die Herstellung eines transparenten und für alle Transaktionen gültigen Wechselkurses sein, der auf Angebot und Nachfrage flexibel reagieren würde. Die Arbitrage zwischen den beiden Märkten würde auf eine Einebnung von Kursunterschieden hinwirken.

Die nächste Stufe ist die Herausbildung eines echten Devisenmarktes, an dem Makler und Geschäftsbanken für einen einheitlichen Wechselkurs sorgen, der angesichts der großen Anpassungs- und Umstellungsschwierigkeiten in der DDR gegenüber den westlichen Währungen noch für einige Zeit flexibel sein muß.

Am Ende des Prozesses könnte jedoch die Fixierung eines festen Wechselkurses zur D-Mark stehen (vgl. Ziffer 9). Rasche politische Veränderungen könnten aber auch eine Entwicklung auslösen, die eine weit schnellere Anbindung an die D-Mark notwendig macht.

Falls dabei der Kurs der Ost-Mark zu Beginn niedrig liegt, wäre dies nicht schädlich: Importeure würden mit den knappen Devisen sparsam umgehen, exportierende Unternehmen hätten aus dem für sie günstigen Wechselkurs Anreize zu vermehrten Exportanstrengungen.

6. Reform des Geld- und Bankwesens

Das einstufige Bankwesen muß unterteilt werden in einen eigenwirtschaftlichen, im Wettbewerb tätigen Geschäftsbankensektor und eine für die Geldpolitik zuständige unabhängige Zentralbank.

Dabei müssen auch die institutionellen Voraussetzungen für einen Geld- und Kapitalmarkt (den es jetzt nicht gibt) und für ein marktwirtschaftliches Notenbankinstrumentarium geschaffen werden.

7. Strikte Kontrolle des Geldangebots

Im gesamten Reformprozeß müßte durchgehend eine strikte Geldangebotskontrolle durchgeführt werden. Sie ist auch entscheidend für einen stabilen Wechselkurs.

Erhebliche Herausforderungen für eine stabilitätsorientierte Geldpolitik können sich ergeben, wenn die Ertragskraft einer größeren Anzahl staatlicher Unternehmen, die bisher zur Finanzierung des Staatshaushalts beigetragen haben, im Zuge der Markt- und Preisreform zurückgeht und der Staat zum Ausgleich für diese Einnahmeausfälle auf Notenbankkredite zurückgreifen würde.

Ein Knapphalten der Ost-Mark ist das wichtigste Instrument, um das Vertrauen der DDR-Bürger in die Ost-Mark zu stabilisieren.

8. Günstige Bedingungen für die Kapitalbildung

Der Zustrom ausländischen Kapitals hängt von Konsequenz und Tempo bei der Preis-, Markt- und Steuerreform ab. Die Bereitschaft zum Engagement in der DDR ist im Prinzip sehr groß.

Aber auch die Bewohner der DDR müssen durch Schaffung eines attraktiven Kapitalmarkts ermutigt werden, ihre vorhandenen Ersparnisse längerfristig zu binden und mehr neues Kapital zu bilden. Dies setzt nicht nur angemessene Zinsen, sondern auch ordnungspolitische Refor-

men voraus. Es muß sich zum Beispiel wieder lohnen, in die Modernisierung des Wohnungsbestandes zu investieren. Auch die Privatisierung staatseigener Wohnungen oder volkseigener Betriebe kann diesen Zielen nutzbar gemacht werden.

9. Stabilisierung des Ost-Mark-Wechselkurses

Allmählicher Übergang zur Konvertibilität, wirksame Geldangebotskontrolle, steigende Exporte und zuströmendes Auslandskapital leisten alle einen Beitrag zur Währungsstabilisierung und erleichtern es, zu einem stabilen Wechselkurs der Ost-Mark zu kommen.

In vielen europäischen Ländern ist ein stabilisiertes Austauschverhältnis zur D-Mark eine erfolgreich angewandte Richtschnur der Geldpolitik. Dies bietet sich auch im Falle der DDR an. Eine marktwirtschaftliche Geldpolitik, die den Wechselkurs zur D-Mark stabilisiert, sorgt damit gleichzeitig nach innen für Vertrauen und Preisstabilität.

10. Währungsunion

Am Ende dieser Entwicklung könnte eine deutsch-deutsche Währungsunion mit gemeinsamer Währung und gemeinsamen Institutionen stehen. Die bis dahin nötige Übergangszeit wird um so kürzer sein, je schneller der Reformprozeß begonnen und je konsequenter er durchgeführt wird. Die Menschen in der DDR haben dann die Perspektive, bald eine deutliche Verbesserung ihrer Lebensverhältnisse zu erfahren.«

Man sieht, die Frage, ob noch genug Zeit sei, war noch stärker in den Vordergrund getreten.

Auch andere aufmerksame Beobachter spürten, daß die Währungsfrage jetzt die politische und psychologische Schlüsselrolle in der weiteren Entwicklung spielte. Die unterschiedlichsten Stufenprogramme und Vorstellungen von einer Wechselkursgarantie der Bundesbank für die Ost-Mark hatten Konjunktur.

Der damalige Dresdner Bürgermeister Berghofer äußerte um den 12. Januar in Hamburg: »Die Währungsfrage wird akut, als Rechnungs- und Denkwährung stellt sich immer mehr die D-Mark ein.«

Bundesbankpräsident Pöhl hatte sich in einer Rede in Paris am 16. Januar zum deutsch-deutschen Währungsverhältnis geäußert und wurde gerade in diesem Punkt in der Presse inten-

siv zitiert: »Wenn nach dem 6. Mai [das war der damals noch angesetzte Termin für die Volkskammer-Wahlen in der DDR] eine frei gewählte Regierung sich für die Marktwirtschaft entscheidet und die notwendigen Voraussetzungen für Investitionen aus der Bundesrepublik und dem Ausland schafft, könnte sie das Ziel eines enormen Kapitalzuflusses werden. Das würde ihr zusammen mit einer vernünftigen Geld- und Wechselkurspolitik die Chance eröffnen, schrittweise zur Konvertibilität überzugehen. Es ist klar, daß dabei die D-Mark als »Anker« angesehen werden muß. Schon jetzt ist die D-Mark in der DDR und anderen Ländern Mittel- und Osteuropas eine Art Parallelwährung.«

Damit hatte auch der Bundesbankpräsident in vorsichtiger Form ein längerfristiges Denken Richtung Wechselkursverbund zu erkennen gegeben.

Prof. Biedenkopf gab am 19. Januar im »Bonner Generalanzeiger« eine politische Einschätzung, die sich schon wenige Wochen später als recht heilsichtig erweisen sollte. »Es gibt nach Öffnung der Grenze starke Kräfte, die auf eine schnelle Lösung der Währungsfrage hindrängen. Man kann die Währungsfrage nicht behutsam lösen. Auf den Wunsch nach Behutsamkeit werden die Menschen in beiden Teilen Deutschlands keine Rücksicht nehmen – auch jene nicht, die unternehmerisch tätig sind. Sie wird schneller gelöst werden, als wir denken.«

Am selben Tag veröffentlichte die Bundestagsabgeordnete Ingrid Matthäus-Maier in der »Zeit« sieben Thesen zu einer deutsch-deutschen Währungsunion. These vier forderte als »rasch wirksame Lösung ... die Bildung eines deutsch-deutschen Währungsverbundes«, verbunden mit ordnungspolitischen Basisreformen. Zu diesem Zweck sollte ein bestimmter D-Mark-Ost-Mark-Kurs von der Bundesbank mit Haushaltsmitteln des Bundes gestützt werden. Dieser Währungsverbund sollte dann gemäß These sechs schließlich in einen »Währungsverbund mit einer einheitlichen Währung, also eine Währungsunion« übergehen. Die »Währungsunion mit der DDR«, so These sieben, »wäre für die Bürger ein einsichtiges und überzeugendes Signal für eine rasche wirtschaftliche Besserung, das sie zum Bleiben in ihrer Heimat veranlassen könnte«.

Auch wenn dieses Konzept ökonomisch noch nicht voll durchgeformt war, traf es doch politisch den Kernpunkt und den Nerv der allgemeinen Stimmungslage.

문서 번호 14

동서독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협약 - 동독 정부 초안

1990 년 1 월 17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정부, 서독 정부

내용:

- 동독과 서독은 1972 년에 체결한 동서독 기본 협약과 헬싱키조약을 근거로 유럽 평화질서 강화를 위한 계약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 상호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 자문위원회(Politische Konsultivkommission)를 설립한다. 위원회 대표는 동독 각료 회의 의장과 서독 연방정부의 총리로 한다. 위원회는 양국의 의회와 정부에 권고할 내용을 결정한다.
- 동독과 서독의 부처 및 기타 기관들은 동서독의 정치 자문위원회와 정부를 자문해 줄 공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상호 침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양 측은 군비 축소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시장 경제의 원칙 하에 경제 및 통화 연합을 구성하고, 인프라 확대를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한 합의는 1990 년에 체결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민간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 서독은 동독의 유럽 공동체(EG) 회원국 가입 신청을 지원한다.
- 본 협약은 (서) 베를린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며, 4 대 강국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45A, S. 713-716.

Entwurf der Regierung der DDR
Vertrag über Zusammenarbeit und gute Nachbarschaft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fertigung: Berlin, den 17. Januar 1990.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und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tragen von dem gemeinsamen Willen, Frieden, Freiheit,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in einem vereinten Europa zu verwirklichen, ausgehend von ihrer gemeinsamen nationalen Geschichte, Sprache, Kultur sowie anderen ethnischen Gemeinsamkeiten und dem Bestehen zweier Staaten im Rahmen einer deutschen Nation, in dem Bewußtsein, daß die Annäherung und Verflecht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im Einklang mit dem Zusammenwachsen der europäischen Staaten in eine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erfolgen muß, in fester Absicht, eine Vertragsgemeinschaft als neue Dimension der gegenseitigen Beziehunge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gestalten, die den Weg zu einer Konföderation bahnt, in der die Deutschen in beiden Staaten über ihr künftiges Zusammenleben im Einklang mit ihren Nachbarn entscheiden können, sind wie folgt übereingekommen:

Artikel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und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weiteren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werden auf der Basis des »Vertrages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m 21. Dezember 1972 sowie auf der Basis der Schlußakte von Helsinki und aller anderen Dokumente des KSZE-Prozesses durch enge und umfassende Vertragsbeziehungen der guten Nachbarschaft eine Vertragsgemeinschaft zum Wohle der Menschen sowie zur Stärkung de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entwickeln. Durch die Vertragsgemeinschaft soll die politische, wirtschaftliche, umwelt-, energie- und verkehrspolitische, kulturelle und abrüstungspolitische Zusammenarbeit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gefördert und ihr eine neue Qualität verliehen werden.

Artikel 2

- (1)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kommen überein, als Organ der Vertragsgemeinschaft eine paritätisch zusammengesetzte Politische Konsultativkommission zu bilden. Sie steht unter Leitung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s Bundeskanzler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2) Die Politische Konsultativkommission hat die Aufgabe, Grundfragen der Ausgestaltung der Vertragsgemeinschaft und ihrer Weiterentwicklung zur Konföderation zu beraten, die Tätigkeit bestehender und zu bildender gemeinsamer Gremien zu koordinieren sowie Empfehlungen an die Parlamente und Regierungen beider Staaten zur Entwicklung von Beziehungen guter Nachbarschaft auszuarbeiten.
- (3) Die Zusammensetzung und Geschäftsordnung der Politischen Konsultativkommission werden zwischen den Regier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sondert vereinbart.
- (4) Die Ministerien und andere Institution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önnen für die Realisierung der Zusammenarbeit in ihrer jeweiligen Zuständigkeit paritätisch zusammengesetzte gemeinsame Gremien bilden, die Empfehlungen an die Politische Konsultativkommission sowie an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ie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arbeiten.

Artikel 3

Die Vertragsschließenden Seiten werden alle in der Schlußakte von Helsinki und den anderen KSZE-Dokumenten eingegangenen Verpflichtungen beispielhaft erfüllen. Sie ergreifen eigene sowie gemeinsame Initiativen für die Entwicklung zu einer neuen Qualität des KSZE-Prozesses, die dem gesellschaftlichen Wandel in Europa entspricht, mit dem Ziel, eine dauerhafte europäische Friedensordnung zu gestalten und den Prozeß des konföderativen Zusammenschlusses der Staaten Europas zu fördern.

Artikel 4

(1) Die Vertragsschließenden Seiten leisten jeder für sich, gemeinsam sowie im Rahmen der jeweiligen Bündnisse, denen sie angehören, konkrete Beiträge zur Abrüstung und Rüstungskontrolle mit dem Ziel einer gegenseitigen strukturellen Angriffsunfähigkeit. (2) Die Vertragsschließenden Seiten unterstützen die Durchführung vertrauens- und sicherheitsbildender Maßnahmen, insbesondere in Europa, und die Vereinbarung weiterer Maßnahmen auf diesem Gebiet. Dazu streben sie nach kooperativen Sicherheitsstrukturen zwischen ihren Streitkräften, von denen positive Impulse für die Entwicklung des Vertrauensverhältnisses zwischen den Streitkräften beider Paktsysteme in Europa ausgehen.

Artikel 5

Mit dem Ziel, praktische Solidarität zu üben und soziale Gerechtigkeit zu sichern, streben die Vertragsschließenden Seiten an, die Bedingungen für die Lebensqualität in beiden deutschen Staaten anzugleichen. Zu diesem Zweck stellen sie folgende Aufgaben in den Mittelpunkt ihrer Vertragsgemeinschaft:

- Schaffung eines Wirtschaftsverbundes auf der Basis marktwirtschaftlicher Prinzipien, die in ihrer sozialen und ökologischen Orientierung auf das Wohl der Bürger ausgerichtet sind. Beide Seiten fördern alle Aktivitäten, die sich in Übereinstimmung mit den Entwicklungszielen und Bedürfnissen der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Märkte befinden. Sie ziehen neue, zukunftsorientierte Bereiche stärker in die Zusammenarbeit ein. Sie entwickeln qualitativ neue Formen der Zusammenarbeit und schaffen dafür entsprechende Institutionen.
- Vereinbarung eines Währungsverbunds mit dem Ziel, volkswirtschaftliche Nachteile aus unrealistischen Wechselkursen für beide Staaten zu vermeiden.
- Ausbau der Infrastruktur, insbesondere der Kommunikationsnetze, der umweltverträglichen Energieerzeugung und des Verkehrs.
- Verwirklichung eines gemeinsamen Programms zur wirksamen Verminderung und Vorbeugung der Umweltverschmutzung sowie zur Herstellung gesunder Umweltverhältnisse. Zur schnellen Realisierung dieser Aufgaben werden noch im Jahr 1990 die erforderlichen Vereinbarungen abgeschlossen.

Artikel 6

Die Vertragsschließenden Seiten verstärken ihre Zusammenarbeit im humanitären Bereich mit dem Ziel, ein möglichst gleiches Niveau der Verwirklichung der zivilen,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sozialen und kulturellen Rechte für die Menschen in beiden deutschen Staaten zu erlangen. Sie tragen damit zur Schaffung eines gemeinsamen europäischen Rechtsraumes bei.

Artikel 7

Die Vertragsschließenden Seiten fördern eine umfassende Zusammenarbeit auf den Gebieten der Kultur, Wissenschaft und Bildung. Sie entwickeln insbesondere eine enge Kooperation

bei der Pflege und schöpferischen Aneignung des nationalen und des europäischen Kulturerbes sowie den Austausch kultureller und wissenschaftlicher Leistungen.

Artikel 8

(1)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fördern die partnerschaftlichen Beziehungen auf kommunaler Ebene. Sie unterstützen die Tätigkeit von Regionalausschüssen aus Vertretern von Gebietskörperscha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ie einer entsprechenden Kommission auf Regierungsebene.

(2)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fördern die Zusammenarbeit gesellschaftlicher Kräfte, von Kirchen und Religionsgemeinschaften, Parteien und Organisationen, Jugend und Sportverbänden,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gesamteuropäische Zielsetzungen.

Artikel 9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d einen Antra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Mitgliedschaft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unterstützen.

Artikel 10

(1)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stimmen darin überein, daß durch diesen Vertrag die von ihnen früher abgeschlossenen oder sie betreffenden zweiseitigen und mehrseitigen internationalen Abkommen und Vereinbarungen nicht berührt werden.

(2) Die Vertragschließenden Seiten stellen fest, daß die Rechte und Verantwortlichkeiten der Vier Mächte und die entsprechenden diesbezüglichen vierseitigen Vereinbarungen, Beschlüsse und Praktiken durch diesen Vertrag nicht berührt werden können.

Artikel 11

Entsprechend dem Vierseitigen Abkommen vom 3. September 1971¹ wird dieser Vertrag mit Ausnahme des Artikels 4 in Übereinstimmung mit den festgelegten Verfahren auf Berlin (West) ausgedehnt.

Artikel 12

Dieser Vertrag bedarf der Ratifikation und tritt am Tage des Austausches der Ratifikationsurkunden in Kraft.

Ausgefertigt in
in deutscher Sprache.

am

in zwei Urschriften

Für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¹ Nr. 2 Anm. 25

문서 번호 15

협력과 선린우호관계에 관한 동서독 협약 - 서독 정부 초안

1990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내용: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는 상호 관계에 대한 8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 경제전 차원(Ebene) 및 분야(Bereiche) 간 긴밀한 협력, 공동 기관의 설립.
- 경제, 공동 인프라, 환경 보호, 법 제도, 노동 및 복지 제도 분야는 계약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 공동 위원회의 설립: 경제 관계 강화 위원회; 재정, 화폐, 세금 위원회; 교통, 상호 우편 및 통신 교환 개선 위원회, 환경 보호 위원회; 법제도 위원회; 노동 복지 위원회; 문화 위원회; 과학 기술 위원회; 건축, 도시 건설, 주택 사업 위원회; 식품, 농업, 산림 위원회; 언론 위원회
-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지방 위원회 구성
- 기존 위원회 유지: 검문 위원회, 교통 위원회, 국경 위원회
- 공동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 내 양 측 대표단의 지도부 혹은 대표자 선정
- 대표단의 대표들은 반 년 주기로 회동한다.
- (서) 베를린 지역으로의 협약 확대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139, S. 695.

Entwurf der Bundesregierung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Zusammenarbeit und gute Nachbarschaft

BArch, B 136/20635, 221 – 35014 Na 6 Bd. 1. – Stand: 18. Januar 1990.

Die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r Grundlage des Vertrages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Dezember 1972,
angesichts der insbesondere durch die Öffnung der Grenzen in Deutschland eingetretenen neuen Entwicklungen in den 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m Bewußtsein, daß sie gemeinsam Verantwortung tragen für die Menschen in Deutschland sowie für eine organische Entwicklung zur Verwirklichung von Freiheit, Menschenrechten und Demokratie in Europa,
in dem Bestreben, zu Stabilität und Frieden in Europa auf der Grundlage freier Selbstbestimmung und umfassender Zusammenarbeit entsprechend den Zielsetzungen der KSZE-Schlußakte von Helsinki und den anderen KSZE-Dokumenten beizutragen,
mit dem Ziel, durch Vertiefung der Zusammenarbeit und Einrichtung gemeinsamer Institutionen eine Vertragsgemeinschaft zu entwickeln, um die besonderen Beziehungen der beiden Staaten weiter auszugestalten und so einen Beitrag zur Überwindung der Trennung Deutschlands und Europas zu leisten,
sind wie folgt übereingekommen:

Artikel 1

(1) Die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auf der Grundlage des Vertrages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Dezember 1972 die Zusammenarbeit auf allen Ebenen und in allen Bereichen verdichten. Sie werden alle Möglichkeiten des Gesprächs und der Zusammenarbeit nutzen, um für gemeinsame Probleme gemeinsame Lösungen zu entwickeln.

(2) Sie werden die über weitere Fragen von beiderseitigem Interesse bereits laufenden Konsultationen fortführen und intensivieren.

(3) Sie haben die Absicht, zur Regelung praktischer Fragen weitere Vereinbarungen und Verträge abzuschließen, insbesondere auch auf weiteren als den in Artikel 7 des Vertrages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nannten Gebieten.

(4) Die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gemeinsame Institutionen für die Zusammenarbeit auf allen Ebenen errichten und die Errichtung solcher Institutionen fördern.

Artikel 2

Die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achten angesichts der aktuellen Entwicklung Zusammenarbeit und Annäherung in den Bereichen der Wirtschaft, der gemeinsamen Infrastruktur, des Umweltschutzes, des Rechts sowie im Arbeits- und Sozialwesen als besonders wichtig für die Entwicklung einer Vertragsgemeinschaft.

Artikel 3

(1) Für die Zusammenarbeit sind folgende gemeinsame Kommissionen eingerichtet:

- a) Gemeinsame Kommission zur Vertiefung der wirtschaftlichen Beziehungen mit der Aufgabe, die Wirtschafts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weiterzuentwickeln und neue Bereiche der wirtschaftlichen Zusammenarbeit zu erschließen; Einzelheiten sind im Briefwechsel vom 19. Dezember 1989 zwischen dem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für Außen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regelt.¹
 - b) Gemeinsame Kommission für Finanzfragen, Währungsprobleme und Steuern.
 - c) Gemeinsame Kommission zu Verkehrsfragen, die sich insbesondere mit der Verbesserung des Verkehrswegenetzes sowie der mittel- und langfristigen Verkehrswegeplanung vornehmlich für Straßen und Eisenbahnverbindungen befassen soll.
 - d) Gemeinsame Kommission zur Verbesserung des gegenseitigen Post- und Fernmeldeverkehrs mit der Aufgabe, Fragen der weiteren Ausgestaltung der Post- und Fernmeldebeziehungen zu erörtern.
 - e) Gemeinsame Umweltkommission mit der Aufgabe, die Zusammenarbeit zum Schutz und zur Verbesserung der Umwelt sowie auf dem Gebiet des Strahlenschutzes zu vertiefen, einen ökologischen Handlungsplan zu entwickeln und den Rahmen für einen abgestimmten Naturschutz zu schaffen.
 - f) Gemeinsame Kommission zu Rechtsfragen mit der Aufgabe, insbesondere aktuelle Fragen des Rechtsverkehrs und des Rechtsschutzes zu regeln, sowie der Aufgabe, mit offenen Vermögensfragen zusammenhängende Rechtsfragen zu klären.
 - g) Gemeinsame Kommission für Arbeit und Soziales mit der Aufgabe, Fragen der sozialen Sicherung sowie des Arbeitsrechts und des Arbeitsmarktes sowie Fragen des Gesundheitswesens zu erörtern.
 - h) Gemeinsame Kulturkommission mit der Aufgabe, die kulturelle Zusammenarbeit abzustimmen und zu vertiefen.
 - i) Gemeinsame Kommission für Wissenschaft und Technik gemäß Artikel 4 des Abkommens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Wissenschaft und Technik vom 8. September 1987².
 - j) Gemeinsame Kommission für Bauwesen, Städtebau und Wohnungswirtschaft mit der Aufgabe, Fragen in diesen Bereichen, insbesondere der Erhaltung und Erneuerung der Bausubstanz in Städten und Gemeinden, zu erörtern.
 - k) Gemeinsame Kommission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mit der Aufgabe, auf diesen Gebieten die Felder einer engeren Zusammenarbeit näher zu bestimmen und diese Zusammenarbeit zu intensivieren.
 - l) Gemeinsame Kommission zu Medienfragen.
- (2) Für weitere Bereiche können durch Vereinbarung zwischen den jeweils zuständigen Ministern beider Seiten gemeinsame Kommissionen gebildet werden.
- (3) Die Kommissionen können nach Bedarf Expertengruppen, Fachgruppen oder andere Untergruppen einsetzen.

Artikel 4

¹ Gleichlautende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Haussmann und des Ministers Beil über die Bildung einer Gemeinsamen Kommission, 19. Dezember 1989: BArch, B 136/20578, 221 – 35014 Ge 31 Bd. 2. Ferner vereinbarten die Minister am gleichen Tag, »eine Rahmenvereinbarung über wirtschaftliche und industrielle Zusammenarbeit abzuschließen« (ebd.). Schreiben veröffentlicht in: Außenpolitische Korrespondenz. Hg. von der Hauptabteilung Presse des Ministeriums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lin. 33. Jg. Nr. 48. 22. Dezember 1989, 380.

²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n Gebieten der Wissenschaft und Technik, 8. September 1987, mit Briefwechsel, in: BGBl. 1988 II, 78-80.

(1) Auf regionaler und lokaler Ebene können Regionalausschüsse gebildet werden. Diese haben die Aufgabe, die Zusammenarbeit regionaler und lokaler Stellen in allen Bereichen zu fördern, Vorschläge für gegenseitige Hilfen und andere Empfehlungen zu erarbeiten sowie Fragen der Entwicklung der Region einschließlich Fragen abgestimmter Planungen zu erörtern.

(2) Es wird eine Gemeinsame Regionalkommission errichtet, die die Arbeit der Regionalausschüsse koordiniert, insbesondere indem sie für gegenseitige Information, auch über die Arbeit der in Artikel 3 und 5 genannten Kommissionen, sorgt und übergreifende Fragen klärt.

Artikel 5

Die zur Behandlung gemeinsamer Probleme vereinbarten gemeinsamen Kommissionen,

a) Transitkommission gemäß Artikel 19 des Abkommens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itverkehr von zivilen Personen und Güter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vom 17. Dezember 1971³,

b) Verkehrskommission gemäß Artikel 32 des Vertr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Fragen des Verkehrs vom 26. Mai 1972⁴,

c) Grenzkommission gemäß Zusatzprotokoll zu Artikel 3 des Vertrages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Dezember 1972⁵,

setzen ihre Arbeit auf der Grundlage der geschlossenen Abkommen und Vereinbarungen fort. Die Aufgaben und die Arbeit der in bestehenden Abkommen und Vereinbarungen bestellten Beauftragten beider Seiten werden durch diesen Vertrag nicht berührt.

Artikel 6

(1) Die Delegationen der beiden Seiten in den gemeinsamen Kommissionen werden in der Regel durch die jeweils zuständigen Minister oder durch von diesen bestellte Vertreter geleitet. Im übrigen bestimmt jede Seite die Zusammensetzung ihrer Delegation. Insbesondere können auch Vertreter regionaler oder lokaler Stellen sowie Fachleute in die Delegation aufgenommen oder zu den Beratungen hinzugezogen werden.

(2) Die Regionalausschüsse (Artikel 4 Abs. 1) werden von einem Vertreter der betreffenden Region geleitet. Den Delegationen kann je ein Vertreter der beiden Regierungen angehören.

(3) Die Kommissionen und Regionalausschüsse treten nach Vereinbarung oder auf Verlangen einer Seite zusammen. Die einladende Seite bestimmt den Tagungsort.

(4) Vorschläge und Entscheidungen dieser Gremien können nicht gegen das Votum einer der beiden Seiten erfolgen. Einzelheiten des Geschäftsablaufes und der Arbeitsweise regeln die genannten Gremien einvernehmlich.

Artikel 7

Die Delegationsleiter der in Artikel 3 und 4 Abs. 2 genannten Kommissionen treffen halbjährlich, auf Verlangen einer Seite auch in kürzeren Abständen, zusammen.

Diese Treffen sollen der Koordinierung der Zusammenarbeit der genannten Gremien dienen und Impulse für deren Arbeit und für eine Vertiefung der Zusammenarbeit aller beteiligter Stellen geben.

Artikel 8

³ Abkommen mit Zusatzvereinbarungen in: Bulletin. Nr. 183. 11. Dezember 1971, 1954-1965.

⁴ BGBl. 1972 II, 1450-1453.

⁵ Nr. 21 Anm. 1.

Entsprechend dem Vier-Mächte-Abkommen vom 3. September 1971⁶ werden dieser Vertrag und die auf seiner Grundlage abgeschlossenen Vereinbarungen in Übereinstimmung mit den festgelegten Verfahren auf Berlin (West) ausgedehnt.

Geschehen in... am... in zwei Urschriften in deutscher Sprache.

Für die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ür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⁶ Nr. 2 Anm. 25.

문서 번호 16

모드로의 계획 - “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

1990 년 2 월 1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

내용:

- 동독은 과거에도 이미 국가 간의 연방제에 근거한 통일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의 동독 사회의 변혁을 그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좋은 기회로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만 한다.
- 독일 통일은 유럽 연합과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동서독은 모두 군사적 정치적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 2 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고, 독일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모드로우는 독일 문제를 세 단계에 걸쳐 해결하고자 한다. 제 1 단계: 국가연방제의 요소를 지닌 선린 계약 공동체와 경제, 화폐, 교통 부문의 통합. 제 2 단계: 공동 조직과 기관들(의회 위원회, 주정부 상원(Länderkammer), 공동 집행기구들)이 설치된 양 독일 국가의 연방체 구성. 제 3 단계: 단일화 된 독일 국가는 공동 의회와 공동 정부+V11 를 둔 연방(Föderation) 혹은 연합(Bund)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출처: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Berlin, 4/1990(동독 외무부 홍보처 발간)

Modrows Plan – "Für Deutschland einig Vaterland" Berlin, 1. Februar 1990

DDR-Ministerpräsident Hans Modrow erläuterte Vorschläge für den Weg zur deutschen Einheit. Auf einer Pressekonferenz der Regierung der DDR am 1. Februar in Berlin stellte Ministerpräsident Hans Modrow den in- und ausländischen Journalisten seine Konzeption für den Weg zu einem einheitlichen Deutschland vor, die er wie folgt begründete:

Die Völker Europas blicken in diesen Tagen und Wochen auf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Die kompliziert verlaufende demokratische Erneuerung in der DDR und die künftigen Beziehungen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sind n erheblichem Einfluß auf das Europa von heute und in diesem Jahrzehnt. Frieden, Sicherheit und Stabilität auf dem Kontinent hängen mehr denn je davon ab, wie die Deutschen ihre Probleme lösen. Dafür unterbreite ich eine Konzeption.

Deutschland soll wieder einig Vaterland aller Bürger deutscher Nation werden. Damit von ihm nie mehr Gefahr für Leben und Gut seiner Nachbarn ausgeht, sind Verantwortungsbewußtsein, Behutsamkeit und Verständnis für das Machbare und für Europa Ertragbare erforderlich.

Das kann gewährleistet werden bei fester Einbindung der deutsch-deutschen Beziehungen in die gesamteuropäische Entwicklung. So wie sich die DDR und die BRD in ihrem Streben nach qualitativ neuer Zusammenarbeit und stärkerem Zusammenwachsen als Teil des gesamteuropäischen Einigungsprozesses verstehen, werden sie zum Wohl ihrer Völker und nicht zum Schaden und auf Kosten anderer ihre gemeinsamen Zukunft gestalten.

Deshalb ist es geboten, dem verständlichen Drängen großer Teile der Bevölkerung in beiden Staaten ein Richtmaß zu geben; das eine friedliche Entwicklung ermöglicht und einen vernünftigen Zeithorizont für die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erkennen läßt. Dieser Zeithorizont bestimmt sich durch das Bewältigen der notwendigen Schritte.

Die DDR unterbreitete in der Vergangenheit mehrfach konkrete Vorschläge zur Wieder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Diese Vorschläge, darunter der Plan zur Schaffung einer deutschen Konföderation, fanden damals jedoch nicht den gebührenden Widerhall. Es darf nicht zugelassen werden, daß die heutige Chance für grundlegende qualitative Veränderungen in den deutsch-deutschen Beziehungen erneut ungenutzt bleibt, der praktische Weg dahin durch unausgewogene oder rechtswidrige Forderungen blockiert wird.

Nach der Logik und seinem Sinn nach wird der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eng mit dem Bau des gesamteuropäischen Hauses und der europäischen Konföderation verbunden sein. In diesem gesamteuropäischen Haus darf kein Platz für Politik der Stärke sein. Es ist davon auszugehen, daß bereits im Stadium der Konföderation beide deutsche Staaten sich Schritt für Schritt von ihren Bündnisverpflichtungen gegenüber dritten Ländern lösen und den Status militärischer Neutralität erlangen. Die Grenze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hört dann auf, Trennlinie der beiden Militärgruppierungen mit allen daraus resultierenden Folgen zu sein.

Die Konzeption „Für Deutschland einig Vaterland“, die ich Ihnen unterbreiten möchte, sieht ein stufenweises für die europäischen Völker überschaubares und berechenbares Zusammengehen beider deutscher Staaten vor. Nichts darf geschehen, was dem Prozeß zur Überwindung, der Teilung Europas zuwiderläuft und neue Gefahren schafft. Bestehende gesamteuropäische Strukturen wie der KSZE-Prozeß sollten den Rahmen bilden.

Das Konzept enthält Vorschläge, wie die Überwindung der Spaltung der deutschen Nation in eine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 vorstellbar ist. Damit eröffnen sich ganz neue Perspektiven der Abrüstung für Europa und darüber hinaus. Deutschland und nicht nur Deutschland hat die realistische Chance, von Massenvernichtungswaffen frei zu werden.

Anliegen ist es, und darin weiß ich mich mit vielen Politikern, mit unzähligen Bürgern beider deutscher Staaten einig, daß die Deutschen in freier Selbstbestimmung die Einheit ihres Vaterlandes erreichen und dieser Prozeß eingebettet ist in die gemeinsamen Anstrengungen für ein friedliches kooperatives Europa.

Ich darf Ihnen nun meine Konzeption vortragen.

Für Deutschland, einig Vaterland. Konzeption für den Weg zu einem einheitlichen Deutschland.

Europa tritt in eine neue Etappe seiner Entwicklung ein. Das Nachkriegskapitel wird abgeschlossen. Voraussetzungen für eine friedliche und gutnachbarliche Zusammenarbeit aller Völker bilden sich heraus. Die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rückt auf die Tagesordnung.

Das deutsche Volk wird seinen Platz beim Aufbau der neuen Friedensordnung finden, in deren Ergebnis sowohl die Teilung Europas in feindliche Lager als auch die Spaltung der deutschen Nation überwunden werden. Es ist die Stunde gekommen, einen Schlußstrich unter den zweiten Weltkrieg zu ziehen, einen deutschen Friedensvertrag abzuschließen. Durch ihn würden alle Probleme geregelt, die mit der Aggression Hitlerdeutschlands und dem Scheitern des " Dritten Reiches " verbunden sind. Eine endgültige Lösung der deutschen Frage kann nur in freier Selbstbestimmung der Deutschen in beiden Staaten erreicht werden, in Zusammenarbeit mit den vier Mächten und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teressen, aller europäischen Staaten. Sie muß den gesamteuropäischen Prozeß fördern, der unseren Kontinent ein für allemal von militärischen Gefahren befreien soll. Die Annäherung beider deutscher Staaten und ihre nachfolgende Vereinigung darf durch niemanden als Bedrohung betrachtet werden.

In diesem Sinne schlage ich einen verantwortungsbewußten nationalen Dialog vor. Sein Ziel sollte es sein, konkrete Schritte zu bestimmen, die zu einem einheitlichen Deutschland führen, das ein neuer Faktor der Stabilität, des Vertrauens, des Friedens in Europa zu werden bestimmt ist.

Die Vertreter der DDR und der BRD könnten mit einem solchen Dialog und in gleichberechtigten Verhandlungen bestmögliche Antworten auf die Fragen nach der Zukunft der deutschen Nation finden.

Die Schritte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könnten sein:

- Abschluß eines Vertrages über Zusammenarbeit und gute Nachbarschaft als eine Vertragsgemeinschaft, die bereits wesentliche konföderative Elemente enthalten sollte wie Wirtschafts-, Währungs- und Verkehrsunion sowie Rechtsangleichung.
- Bildung einer Konföderation von DDR und BRD mit gemeinsamen Organen und Institutionen, wie z. B. parlamentarischer Ausschuß, Länderkammer, gemeinsame Exekutivorgane für bestimmte Bereiche.
- Übertragung von Souveränitätsrechten beider Staaten an Machtorgane der Konföderation.
- Bildung eines einheitlichen deutschen Staates in Form einer Deutschen Föderation oder eines Deutschen Bundes durch Wahlen in beiden Teilen der Konföderation, Zusammentreten

eines einheitlichen Parlaments, das eine einheitliche Verfassung und einheitliche Regierung mit Sitz in Berlin beschließt

Notwendige Voraussetzungen für diese Entwicklung

- Jeder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trägt dafür Sorge, die Schritte zur Einheit Deutschlands mit seinen Verpflichtungen gegenüber anderen Ländern und Ländergruppen sowie mit notwendigen Reformen und Veränderungen in Übereinstimmung zu bringen. Hierzu gehört der Übergang der DDR zur Länderstruktur. Wahrung von Stabilität, Recht und Gesetz im Innern gehören ebenso zu den unabdingbaren Voraussetzungen wie die strikte Erfüllung früher abgeschlossener Verträge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die unter anderem vorsehen, sich gegenseitig nicht in innere Angelegenheiten einzumischen.
- Wahrung der Interessen und Rechte der vier Mächte sowie der Interessen aller Völker Europas an Frieden, Souveränität und sicheren Grenzen. Die vier Mächte sollten ihre Absicht erklären, nach Bildung eines einheitlichen deutschen Staates alle aus dem zweiten Weltkrieg und der Nachkriegsperiode entstandenen Fragen abschließend zu regeln einschließlich der Anwesenheit ausländischer Truppen auf deutschem Boden und der Zugehörigkeit zu Militärbündnissen.
- Militärische Neutralität von DDR und BRD auf dem Weg zur Föderation.

Dieser Prozeß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vollzieht sich auf der Grundlage von Vereinbarungen zwischen den Parlamenten und Regierungen der DDR und der BRD. Alle Seiten bekunden ihren Willen zu demokratischen und gewaltlosen Formen der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und schaffen dazu notwendige Garantien einschließlich Volksbefragungen.

Diese Konzeption bekennt sich w den demokratischen, patriotischen, fortschrittlichen Ideen und Bewegungen für die Einheit der deutschen Nation aus gemeinsamer Geschichte und jüngster Vergangenheit. Sie bekennt sich zu den humanistischen und antifaschistischen Traditionen des deutschen Volkes.

Diese Konzeption wendet sich an die Bürger der DDR und der BRD, an alle europäischen Völker und Staaten, an die Weltöffentlichkeit mit der Bitte um Unterstützung.

Quelle: *Aussenpolitische Korrespondenz* 4/90

문서 번호 17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의 제안

1990년 2월 7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청 / 연방 내무부 독일통일 실무그룹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가 공동경제화폐구역의 도입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서독 연방정부는 동서독 공동의 화폐통합을 위한 제안이 독일 통일로 향하는 명확한 신호로서 그것은 기본법 (헌법)에 명시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협상에 나서는 서독정부의 입장이 11 개 조항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 연방 수상청/연방내무부의 독일 통일 정책그룹

(Bundeskanzleramt/Arbeitsgruppe zur Deutschen Einheit des Bundesinnenministeriums)

Nr. 165B Währungsunion mit Wirtschaftsreform

Die Bundesregierung erklärt sich bereit, mit der DDR unverzüglich in Verhandlungen über eine Währungsunion mit Wirtschaftsreform einzutreten. Unser Angebot einer Währungsunion mit der DDR ist ein klares Signal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der wir uns verpflichtet fühlen und die unser verfassungsmäßiges Gebot ist.

1. Das wirtschaftliche Hauptanliegen der großen Mehrheit der Bürger der DDR ist es, schnellstmöglich Anschluß an das Realeinkommensniveau der Bundesrepublik zu finden („Wir haben 40 Jahre umsonst gearbeitet“). Sie wollen die politische Selbstbestimmung und die wirtschaftliche Selbstverwirklichung. Es muß sich wieder lohnen, in der DDR zu bleiben.
2. Das Realeinkommensgefälle liegt begründet im Abstand der Arbeitsproduktivität, der von Fachleuten mit 50 Prozent angegeben wird. Das heißt, die technologische und kapitalmäßige Ausstattung der DDR-Betriebe liegt weit unter dem Niveau unserer Wirtschaft.
3. Der wohl erfolgversprechendste Weg zur Hebung der Produktivität der DDR-Wirtschaft besteht in der Verklammerung der beiden deutschen Volkswirtschaften durch eine Währungsunion auf der Grundlage unmittelbar einzuleitender, tiefgreifender marktwirtschaftlicher Reformen in der DDR.
4. Eine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setzt ein gemeinsames ordnungspolitisches Fundament voraus. Die Einzelheiten hierzu sind bekannt: Herstellung von Märkten, freie Preise, Dominanz des Privateigentums an den Produktionsmitteln, freier Außenhandel,

Gewerbefreiheit und Rechtsschutz, freie Tarifvertragsparteien, ein leistungsfähiges Steuersystem.

5. Die Anhebung der Produktivität der DDR-Betriebsstätten erfordert einen Kapitaleinsatz in Milliardenhöhe. Sie kann von der Größenordnung her wie auch vom ordnungspolitischen Konzept nur durch die Mobilisierung von Privatkapital bewerkstelligt werden. Dies wiederum setzt einen ausreichenden Investitionsschutz und möglichst liberale Bedingungen für ein Engagement westlicher Investoren voraus.
6. Die bislang bekannten Vorstellungen der DDR, insbesondere der PDS, bezüglich Dominanz des Volkseigentums im Industriebereich, des Genehmigungsverfahrens für Direktinvestitionen, der Besteuerung, des gesetzlichen Anspruchs auf einen Arbeitsplatz und schließlich über einen DDR-spezifischen Weg zu einer neuen Variante der Marktwirtschaft sind kaum geeignet, das zur Sanierung der DDR erforderliche Kapital zu mobilisieren.
7. Zur Hebung der Produktivität durch Mobilisierung von Privatkapital muß komplementär der Aufbau einer modernen und leistungsfähigen Infrastruktur (Straßennetz, Telekommunikation, Stadtanierung usw.) bewerkstelligt werden.
8. Mit Hilfen aus den öffentlichen Haushalten der Bundesrepublik lassen sich die Produktivitäts- und Infrastrukturdefizite der DDR nicht beseitigen. Unsere Hilfe muß sich auf folgende Punkte beschränken:
 - Erleichterungen für die Menschen durch den Devisenfonds.
 - Kurzfristige humanitäre Hilfen, z.B. medizinische Versorgung.
 - Begrenzte Förderung von privaten Investitionen im Bereich kleiner und mittlerer Betriebe.
 - Gezielte Infrastruktur- und Umweltschutzprojekte im beiderseitigen Interesse (z.B. Verkehrswege nach Berlin, Umweltprojekte mit grenzüberschreitender Bedeutung).
 Als Beispiel sei auf die europäische Integration verwiesen: Das Realeinkommensniveau in Spanien und Portugal kann nur durch ausländische Direktinvestitionen und durch Freisetzung privater Antriebskräfte in diesen Ländern erhöht werden. Öffentliche Hilfen über verschiedene Strukturfonds haben immer nur ergänzenden Charakter.
9. Stünde die Bundesrepublik wirtschaftlich in der Situation von 1982, so wäre ein Einsatz öffentlicher Mittel für Vorhaben in der DDR überhaupt nicht möglich. Aber angesichts der erreichten starken wirtschaftlichen Dynamik können wir Hilfen für die DDR weitgehend aus unseren Sozialproduktzuwächsen finanzieren. Die Deutsche Einheit wird sich als zusätzliches Wachstumsprogramm erweisen. Die Herausforderung des Aufbaus der Volkswirtschaft im anderen Teil Deutschlands wird dynamische Kräfte wecken, und die mittel- und osteuropäischen Märkte bieten nach wirksamen Reformen erhebliche Expansionsmöglichkeiten für unsere Betriebe. Erhebliche Chancen zeigen sich zum Beispiel heute schon im Bereich der Telekommunikation. Im staatlichen Bereich stehen den sich jetzt ergebenden Zusatzbelastungen später erhebliche Einsparungspotentiale gegenüber. So können z.B. die Befreiung Berlins aus der Inselfage sowie neue Wachstumschancen für die Zonenrandgebiete die öffentlichen Haushalte spürbar entlasten. Wer kurzfristig Sonderopfer unserer Arbeitnehmer und Unternehmer (Ergänzungsabgabe, Rücknahme der Steuerreform, Vermögensabgabe) verlangt, muß sich über die Auswirkungen auf Wachstum, Arbeitsplätze und Realeinkommen bei uns und damit auch über die Auswirkungen auf die politische Akzeptanz derartiger Realeinkommens-transfers im klaren sein. Deshalb empfiehlt auch das SVR-Sondergutachten³ eine Fort-

3 Nr.145 Anm.11.

setzung unserer Steuerpolitik und darüber hinaus gezielte kreditfinanzierte öffentliche Hilfen.

10. Die Mobilisierung von westlichem Kapital könnte beschleunigt werden durch die Errichtung einer gemeinsamen Währungsunion. Dafür gibt es im Prinzip drei Modelle:
- Der realwirtschaftliche Ansatz entspricht der sogenannten „Krönungstheorie“. Danach käme ein Währungsverbund mit freier Konvertibilität erst dann in Betracht, wenn die DDR-Wirtschaft Anschluß an unser Niveau gefunden hat. Dieser Weg braucht Zeit. Die Menschen in der DDR erwarten jedoch eine schnelle Lösung.
 - Abzulehnen ist der bis vor kurzem von der SPD vertretene Vorschlag einer künstlichen Verklammerung der DM mit der von den Bürgern in der DDR selbst immer weniger akzeptierten Ost-Mark. Dieses Aufkaufmodell zur Stützung der DDR-Währung würde nichts an den falschen ökonomischen Strukturen in der DDR ändern, aber möglicherweise den Einsatz von Milliarden-Beträgen auf Kosten des Bundes erfordern. Es zeigt sich an diesem Vorschlag einmal mehr, wie wenig die SPD von Wirtschaftsfragen versteht, wie leichtfertig sie die Stabilität unserer eigenen Währung aufs Spiel setzt und wie wenig überlegt sie das Geld der Steuerzahler ohne erfolversprechende ökonomische Konzepte in der DDR einsetzen will.
 - Eine dritte Strategie ist die Einführung der D-Mark als gesetzliches Zahlungsmittel in der DDR, was die Mobilisierung westlichen Kapitals erheblich beschleunigen würde (DM als Kalkulationsbasis der Unternehmen, keine Devisenbewirtschaftung). Dabei müßten zu einem Stichtag alle geld- und kreditwirtschaftlichen Beziehungsgrößen (Preise, Löhne, Mieten, Rent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parguthaben) auf D-Mark umgestellt werden. Das entscheidende Problem liegt dabei in der Festlegung des Umstellungskurses. Eine Entscheidung über diesen Kurs kann erst getroffen werden, wenn die relevanten wirtschaftlichen Daten der DDR auf dem Tisch liegen.

Das Modell setzt im geld- und währungspolitischen Bereich einen partiellen Souveränitätsverzicht der DDR voraus. Die Deutsche Bundesbank bliebe stabilitätspolitischer Herr über die Geldmenge. Die Stabilität der DM darf nicht gefährdet werden.

Im realwirtschaftlichen Bereich erfordert dieses Modell eine sofortige Übernahme unserer Wirtschaftsordnung. Für die damit verbundenen Anpassungsprobleme (vorübergehende Freisetzung von Arbeitskräften, Kaufkraftsicherung der Renten, Bedienung der Auslandsverschuldung) müßten gemeinsame Lösungen gefunden werden.

11. Die Einrichtung einer deutschen Währungsunion ist ein Angebot an die DDR. Die Verantwortlichen im anderen Teil Deutschlands müssen jetzt entscheiden, ob sie diesen Schritt in Richtung auf die deutsche Einheit gehen wollen.

문서 번호 18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

1990 년 2 월 9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재무차관 쾰러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 재무차관 호스트 쾰러가 수상청과 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의 도입을 위한 제안“의 초안이다. 이 초안은 동독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화폐와 경제 통합으로 일정한 시점에서 동독의 마르크는 서독의 마르크에 의해 대체된다. 그 때까지는 동독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종결해야 한다. 그것은 동독에 이단계의 은행체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영업의 자유, 임금과 가격에 대한 규제의 해제, 실업보험의 도입과 다른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 136/20579, 221 - 35014 Ge 33 Band 1

B 136/20579

Dr. Horst Köhler

5300 Bonn 1, 9. Februar 1990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Graurheindorfer Straße 108
Telefon: (0228) 682-4293
Fax: (0228) 682-4420 Tx: 886645
Txx: 2283735 = BMF

Herrn Staatssekretär
Dr. von Würzen

Herrn Ministerialdirektor
Dr. Becker

Herrn Ministerialrat
Dr. Schnurr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Herrn Ministerialdirektor
Wagner

Herrn Ministerialdirigent
Dr. Duisberg

Herrn Ministerialrat
Dr. Ludewig
Bundeskanzleramt

5300 Bonn 1

Dr. Köhler f. Kutschera D²/₂

Z. M. H.
↓

Sehr geehrte Herren,

/ in der Anlage übersende ich das heute nachmittag abgestimmte
Papier "Angebot zur Schaffung eines gemeinsamen Wirtschafts-
und Währungsgebiets" mit folgenden eingearbeiteten Änderungs-
wünschen von Professor Dr. Schlesinger.

- Ziff. III. b) drittes Tilet
"Schaffungen der Voraussetzungen für einen funktionsfähigen
Kapitalmarkt";
- Ziff. III. e) zweites Tilet
"Fragen der Rentenversicherung".

Ich empfehle, diesen Änderungen zuzustimmen.

Mit freundlichen Grüßen

H. Köhler

I. Angebot zur Schaffung eines gemeinsamen Wirtschafts- und Währungsgebiets

Die Bundesregierung macht der Regierung der DDR das Angebot, ein gemeinsames Wirtschafts- und Währungsgebiet zu schaffen. Dieses Angebot besteht im Kern aus zwei Teilen:

1. Zu einem Stichtag wird die Mark der DDR als Währungseinheit und gesetzliches Zahlungsmittel durch die D-Mark ersetzt.
2. Zeitgleich müssen von der DDR die notwendigen recht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Einführung einer sozialen Marktwirtschaft (Rechtsangleichung auf den zentralen Feldern der Wirtschaftsordnung) geschaffen sein.

Beide Elemente stehen für die Bundesregierung in einem unauflösbaren Zusammenhang.

II. Die Chancen

Diese marktwirtschaftliche Reform ist die grundlegende Voraussetzung, um die bisherigen wirtschaftlichen Schwierigkeiten der DDR zu beseitigen, insbesondere die Versorgungsmängel rasch zu überwinden, den erforderlichen Zustrom privaten Kapitals zu ermöglichen und neue zukunftssträchtige Arbeitsplätze zu schaffen.

Dieser Weg verlangt große Anpassungen und Anstrengungen. Der notwendige Strukturwandel in der DDR kann dort vorübergehend den Verlust von Arbeitsplätzen verursachen, führt aber gleichzeitig zu zusätzlicher Beschäftigung und zusätzlichem Einkommen. Bei entschlossenem Handeln überwiegen die Chancen bei weitem die Risiken.

III. Das Verfahren

Die Bundesregierung schlägt der Regierung der DDR sofortige Verhandlungen zur Schaffung eines gemeinsamen Wirtschafts- und Währungsgebietes vor. Zu diesem Zweck wird eine gemeinsame

Kommission gebildet, die unverzüglich Gespräche insbesondere zu folgenden Fragen aufnimmt:

- a) Umfassende Bestandsaufnahme der erforderlichen finanziellen Daten und Fakten in der DDR (z.B. innere und äußere Verschuldung der DDR, Geldumlauf, Staatshaushalt, Lage der Unternehmen).
- b) Währungsfragen
- rechtliche und institutionelle Voraussetzungen für die Übertragung der Regelungen des Bundesbankgesetzes und der Beschlüsse des Zentralbankrats auf die DDR,
 - Schaffung eines zweistufigen Bankensystems in der DDR, Zulassung von privaten Banken, Bankaufsicht,
 - Schaffung der Voraussetzungen für einen funktionsfähigen Kapitalmarkt.
- c) Durchführung der Wirtschaftsreform
- Herstellung einer umfassenden Gewerbefreiheit mit Verlagerung der Entscheidungskompetenz auf Unternehmen und Private,
 - Reform der Eigentumsordnung,
 - zügige marktwirtschaftliche Reform des Preis- und Lohnsystems und Abbau von Subventionen,
 - Herstellung einer effektiven Wettbewerbsordnung,
 - Einführung eines liberalen Außenwirtschaftsrechts.
- d) Finanzen
- Umstellung des Staatshaushalts auf die Anforderungen einer 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u.a. mit rechtlicher Verselbständigung der Staatsbetriebe),

- Einführung eines leistungsgerechten und investitionsfördernden Steuer- und Abgabensystems,
- Übergangslösungen in Form pauschalierter Abgaben und Steuern.

e) Soziale Absicherung

- Einführung einer Arbeitslosenversicherung (einschließlich der notwendigen Instrumente zur Qualifizierung der Arbeitnehmer),
- Fragen der Rentenversicherung.

문서 번호 19

동서독 화폐통합에 관한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

1990년 2월 14일

담당자 / 기관: 서독의 경제발전 평가를 위한 경제전문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위원장 한스 슈나이더,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 평가서이다. 경제전문자문위원회는 독일 내에서 가장 권위있고 신뢰받는 기구 중에 하나이다. 1990년 2월 화폐통합의 조속한 실현이 논의되던 시기에 경제전문자문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여러 관점에서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정부의 경제전문자문위원회의는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화폐통합이 동독 주민 대량으로 서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오히려 동독 주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어서 자기 고향에 남아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동독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폐통합이 경제개혁작업의 선두에 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독에 도이치마르크를 도입함으로써 동독 주민들에게 화폐통합을 통해 서독 주민이 누리는 생활수준을 곧바로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항상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인데, 현재 동독의 생산성이 서독의 생산성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화폐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생산성이 곧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폐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동서독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이 실현된다면 눈에 보이는 소득 격차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곧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독일연방정부는 재정균형배분 제도를 통해 이런 격차를 좁혀야만 한다. 그것은 결국 공공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구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어야 할 재원이 재정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나아가 동독의 가격구조 또한 왜곡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통합으로 인해 서독에 대해 동독이 갖고 생산입지로서의 경쟁력이 악화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독주민들이 화폐통합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이 깨지면 동독을 떠나는 사람의 물결이 다시 거대해 질 것이다. 나아가 화폐통합의 결과 서독과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동독 기업은 갑작스럽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화폐통합이 동서독의 경제적 통합에 마지막 단계일 필요는 없다.

문제는 현재 동독의 정부가 아직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폐통합을 서둘러야만 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동독주민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독정부가 동독 이주자의 수용절차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11/8472, S. 306-308

Zur Frage einer Währungs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hat der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am 9. Februar 1990 einen Brief an den Bundeskanzler Herrn Dr. Helmut Kohl gesandt. Der Brief hat folgenden Wortlaut:

Sehr verehrter Herr Bundeskanzler!

Mit Besorgnis verfolgt der Sachverständigenrat die jüngsten Überlegungen, die auf die baldige Einführung einer Währungsunion mit der DDR hindrängen. Den Kabinettsbeschluss vom 7. Februar nehmen wir zum Anlaß, um Ihnen auf diesem Wege unsere Vorbehalte gegen eine rasche währungspolitische Integration zu übermitteln.

Zur Diskussion steht eine Währungsunion, mit der die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urch die D-Mark ersetzt wird. Mit der Währungsunion verzichtet die DDR vollständig auf die Souveränität in der Geld- und Währungspolitik.

1. Wir halten die rasche Verwirklichung der Währungsunion für das falsche Mittel, um dem Strom von Übersiedlern Einhalt zu gebieten. Zweifellos bedarf es eines deutlichen Zeichens, das den Bewohnern der DDR Hoffnung auf eine nicht nur schnelle, sondern auch nachhaltige Besserung ihrer Lebensverhältnisse verheißt und sie veranlaßt, in ihrer Heimat zu bleiben. Dieses Zeichen sehen wir in der überzeugenden Ankündigung einer umfassenden Wirtschaftsreform, die ohne Verzug in Gang gesetzt wird; wir verweisen hierzu auf die Ausführungen in unserem Sondergutachten. Die Erklärung des Bundeskabinetts, in der ausdrücklich auf die Verbindung von Währungsunion und Wirtschaftsreform hingewiesen wird, könnte den Weg dazu ebnen; dabei kommt es jedoch entscheidend auf die Abfolge der einzelnen Schritte an.

Die Währungsunion sollte nach unserer Auffassung nicht am Beginn stehen:

- Es kann nicht Sinn einer Währungsunion sein, die durch die jahrzehntelange Mißwirtschaft in der DDR aufgeblähten Geldbestände nunmehr im Zuge der Umwandlung in D-Mark in ihrer Kaufkraft aufzuwerten. Statt auf diese Weise Lasten des alten Wirtschaftssystems abzutragen, sollten verfügbare Mittel besser in die Neugestaltung der Wirtschaft investiert werden. In unserem Sondergutachten haben wir dafür plädiert, die Lösung für den Abbau des Geldüberhanges in erster Linie über den Verkauf von Sachwerten aus dem Staatsbesitz der DDR an die Sparer zu suchen, um deren Vermögenseinbuße so gering wie möglich zu halten.

- Es ist wohl unvermeidlich, daß die Einführung der D-Mark bei den Bürgern der DDR die Illusion erwecken muß, mit der Währungsunion sei auch der Anschluß an den Lebensstandard der Bundesrepublik hergestellt. Davon kann jedoch keine Rede sein; das Einkommen ist an die Produktivität gebunden, die bisher weit hinter der in der Bundesrepublik zurückbleibt. Die Erwartung, daß die Produktivität und mit ihr Löhne wie Renten bald erheblich steigen werden, ist wohlbegründet; allerdings müssen die Voraussetzungen dafür im realwirtschaftlichen Bereich geschaffen werden. Die Währungsunion kann dies nicht leisten.

- Die einheitliche Währung wird den Abstand der Einkommen schlagartig verdeutlichen, Forderungen nach einer Korrektur werden nicht auf sich warten lassen und schwerlich abzuweisen sein. Die Nominallöhne werden dann über die Zunahme der Produktivität hinaus ansteigen. Dies geht zu Lasten des Produktionsstandorts DDR, und der dringend erforderliche Kapitalzu- strom aus dem Westen bleibt aus.

Der Druck auf die Bundesrepublik würde anwachsen, den Abstand der Einkommen (Löhne und Renten) durch einen "Finanzausgleich" zugunsten der DDR zu verringern. Riesige Belastungen kämen auf die öffentlichen Haushalte zu. Es wären nicht nur erhebliche Steuererhöhungen unvermeidlich, es würden vielmehr auch öffentliche Mittel in Transfers für konsumtive Verwendungen gebunden, die bei der Finanzierung von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Infrastruktur fehlen müßten. Dies kann nicht im Interesse

der Menschen in der DDR liegen, deren Chance in einem Anstieg der eigenen Leistungsfähigkeit liegt. Private und öffentliche Investitionen - und nicht erhöhter Konsum - sind dafür die Voraussetzung. Transfers könnten sogar die Bereitschaft untergraben, sich selbst anzustrengen.

- Das Argument, eine Währungsunion sei die Voraussetzung, um das Engagement privater Investitionen in der DDR in Gang zu setzen, steht auf schwachen Füßen. Stabile Währungsverhältnisse lassen sich in der DDR auch auf andere Weise herstellen. Eine rasche Zunahme der Investitionen setzt Reformen im realwirtschaftlichen Bereich voraus. Solange die Preisstruktur in der DDR verzerrt ist und die Bedingungen für Investitionen unklar bleiben, bewirkt eine Währungsunion eher das Gegenteil; die Standortqualität der DDR verschlechtert sich im Verhältnis zu Regionen in der Bundesrepublik.

Es kann nicht ausbleiben, daß die Hoffnungen enttäuscht werden, die an die Währungsunion geknüpft werden - und die mit dieser auch bewußt gefördert werden sollen. Greift die Ernüchterung aber um sich, wird der Strom der Übersiedler erst recht anschwellen.

2. Mit einer raschen Währungsunion werden Anpassungsprozesse in Gang gesetzt, die die Produktion und die Beschäftigung in der DDR beeinträchtigen können. Das Produktangebot in der DDR entspricht hinsichtlich Quantität und Qualität vielfach nicht den Wünschen der Menschen. Die Konsumenten, die mit der D-Mark eine konvertible Währung erhalten, werden verstärkt Nachfrage nach Konsumgütern in der Bundesrepublik oder im westlichen Ausland ausüben. Es fließt Kaufkraft aus der DDR-Wirtschaft ab. Die Unternehmen der DDR werden schlagartig einer internationalen Konkurrenz ausgeliefert, der sie gegenwärtig nicht gewachsen sind. Die Erträge der DDR-Unternehmen schrumpfen. Da sie ihre Produkte noch schwerer veräußern können, werden Produktion und Produktivität der Unternehmen sinken. Dies bleibt nicht ohne Rückwirkung auf die Einkommen und die Beschäftigung, diese werden ebenfalls schrumpfen. Dem kurzfristigen Vorteil, daß die Menschen mit der Einführung der D-Mark in der DDR Zugang zu westlichen Märkten erhalten, wird alsbald der Rückschlag folgen, daß mit der tatsächlichen Verwendung dieser Einkommen für Käufe im Westen die eigene Einkommensbasis geschmälert wird. Abwanderungsbewegungen kommen wieder stärker in Gang.

Diese Effekte wären nur zu vermeiden, wenn die Unternehmen der DDR bereits an Konkurrenzfähigkeit gewonnen hätten. Die Mindestvoraussetzung dafür ist eine Unternehmensreform, die die Unternehmen in die Lage setzt, auf die Anforderungen des Marktes flexibel zu reagieren. Eine weitere dringliche Voraussetzung ist die Gewerbefreiheit, die es neuen Unternehmen ermöglicht, an die Märkte zu drängen und den Konsumwünschen der Menschen Rechnung zu tragen.

3. Mit einer der Preisreform voraneilenden Währungsunion würde es zu erhöhten Ineffizienzen im Gütertausch der DDR kommen. Die derzeitigen Preisverzerrungen sind dadurch bedingt, daß die Preise der Güter in der DDR aufgrund vielfältiger staatlicher Eingriffe nicht in Einklang mit den Produktionskosten stehen. Mit der Währungsunion würden sich die Handelsströme an den verzerrten Marktpreisrelationen ausrichten. Noch häufiger als bisher würden DDR-Unternehmen Produkte ausführen, die im Vergleich zum Ausland teuer produziert und nur durch Subventionen konkurrenzfähig gemacht werden. Wo in der DDR auf Produkten hohe Abgaben lasten, wird es zu Importen kommen, auch wenn die Produkte von den Kosten her in der DDR vergleichsweise billig produziert werden könnten. Derartige Exporte und Importe gegen das Kostengefälle, die nur aufgrund der verzerrten Preisrelationen entstehen, bedeuten, daß die DDR im Außenhandel nicht Vorteile erzielt, sondern Nachteile erleidet.

Diese Fehlentwicklungen können nur durch eine schnelle Preisreform in der DDR vermieden werden. Die Preise müssen an die volkswirtschaftlichen Kosten angepaßt werden, und es müssen Preismechanismen eingeführt werden, die neuerliche Preisverzerrungen wirksam verhindern.

4. Wir verkennen keineswegs die Bedeutung der Währungspolitik im wirtschaftlichen Integrationsprozeß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Im Gegenteil, wir haben uns in unserem Sondergutachten dafür ausgesprochen, die Konvertibilität in weiten Bereichen möglichst rasch zu verwirklichen und die volle Konvertibilität als Ziel nicht in allzu weite Ferne zu rücken. Die Maßnahmen der Währungspolitik müssen jedoch im Kontext mit der grundlegenden Reform des Wirtschaftssystems der DDR stehen. Ein Vorpreschen in der Währungspolitik halten wir für einen ungeeigneten Weg. Es könnte zudem - da es Illusionen auf Gesundung ohne eigene wirtschaftspolitische Anstrengungen weckt - die Bereitschaft zu Reformen in der DDR zumindest vorübergehend schwächen.

5. Die Währungsunion müßte keineswegs am Ende des wirtschaftlichen Integrationsprozesses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stehen. Sobald das Problem des Geldüberhanges gelöst, die Reform der Preisbildung gut vorangekommen und die Preisstruktur an die Bedingungen des Weltmarktes angepaßt, das Banken- und Kreditsystem auf die Bedingungen der Marktwirtschaft ausgerichtet und die übrigen Reformvorhaben auf den Weg gebracht sind, kann man auch in der Währungspolitik mutiger sein, zumal die Notenbank der DDR dann Zeit gehabt hat, sich an die Bedingungen eines festen Wechselkurses zur D-Mark und zunehmender Konvertibilität anzupassen. Über die dann notwendigen Maßnahmen mag man frühzeitig verhandeln, sie schon in absehbarer Zeit zu ergreifen erscheint uns als ein Weg, der nicht zum gewünschten Erfolg führen kann.

Die Abwanderungen aus der DDR lassen sich nur dadurch verhindern, daß die Menschen eine glaubwürdige Perspektive für eine baldige und nachhaltige Verbesserung ihres Lebensstandards erhalten. Die Grundvoraussetzung dafür besteht in der fundamentalen Transformation des Wirtschaftssystems der DDR in eine marktwirtschaftliche Ordnung. Die einzelnen Elemente einer solchen Reform haben wir in unserem Sondergutachten dargestellt. Nichts ist bisher in der DDR geschehen, was als sichtbares Zeichen eines wirklichen Neubeginns gewertet werden könnte. Halbherzige Maßnahmen wie das Joint-Venture-Gesetz belegen, daß die gegenwärtige Führung in der DDR sich noch nicht wirklich zu einer marktwirtschaftlichen Umgestaltung der Wirtschaft durchgerungen hat. Es überrascht bei dieser Entwicklung nicht, daß sich der Strom der Abwanderungen fortgesetzt hat.

Was an Reformschritten in der DDR bislang unterblieben ist, kann nicht durch eine Währungsunion ausgeglichen werden. Eine Währungsunion, die sich nicht im Gleichschritt mit dem grundlegenden Umbau des Wirtschaftssystems in der DDR vollzieht, verursacht lediglich Kosten, ohne die wirtschaftlichen Aussichten für die Menschen auf eine tragfähige bessere Basis zu stellen. Der Übersiedlerstrom läßt sich dadurch nicht dauerhaft eindämmen. Priorität muß daher die Wirtschaftsreform in der DDR haben, nicht aber die Währungsunion.

In der Bundesrepublik wird diskutiert, ob das Aufnahmeverfahren für Übersiedler eingestellt und Finanzleistungen reduziert werden sollen. Auf diesem Wege soll Zuwanderungen entgegengewirkt werden. Wir halten das für den gänzlich falschen Weg. Die Diskussion solcher Maßnahmen wird die Ausreisewilligen in der DDR, die bislang noch mit der Ausreise zögern, erst recht zur baldigen Übersiedlung bewegen. Nicht weniger, sondern mehr Übersiedler sind zu erwarten. Würde man den Menschen in der DDR im Gegenteil versichern, daß sie auch in Zukunft mit Hilfen in der Bundesrepublik rechnen können, wird dies viele bewegen, vorerst in der DDR zu bleiben und die weitere Entwicklung dort abzuwarten. Wird die Zeit für Reformen wirklich genutzt, werden sich dann viele entscheiden, doch in der DDR zu bleiben.

Genehmigen Sie, hochverehrter Herr Bundeskanzler, den Ausdruck unserer vorzüglichen Hochachtung



Prof. Dr. Hans K. Schneider

Vorsitzender des Sachverständigenrates

문서 번호 20

화폐통합 대신 동독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누가 담당하며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1990 년 2 월 17 일

담당자 / 기관: 브레멘 대학 교수 루돌프 히켈

내용:

이 문서는 브레멘 대학교 경제학과의 루돌프 히켈교수가 1990 년 2 월에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강연한 원고이다. 당시 그는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판적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학자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이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독과의 화폐공동체를 도입함으로써 동독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도 얻을 수 없는 위험부담이 높은 새로운 실험의 장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2 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서독연방공화국이 출범했던 상황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이 동독 주민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독 경제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화폐공동체를 도입한다는 결정은 경제적 이성을 상실한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동독에 안정적인 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동독은 자국의 화폐뿐만 아니라 재정 경제정책의 자주성까지도 상실하는 것이다.

동서독의 화폐를 1:1 로 교환한다는 것은 나아가 총통화량이 약 15%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도이치마르크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동독 국유재산의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은 동독 중앙은행에 보관하여 국민경제의 순환서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독에 질이 좋은 소비재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도이치마르크를 지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를 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독 주민들이 도이치마르크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서독으로 이주하기 위한 밑천으로 사용하게 될 위험도 있다.

현재 월 1300 도이치마르크에 달하는 동서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서독이 일방적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동독 중소기업과 주요산업분야의 확대를 위해

임금보조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독에 실업보험체계를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 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약 이백 오십만명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희생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시장요소의 도입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조치, 서독의 체제와 유사한 새로운 은행체계의 도입, 친환경기술의 도입, 인프라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이 실시될 경우 약 5 년에서 10 년 후에 서독과 유사한 발전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은 지금 서독의 화폐정책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기 화폐교환율을 1:3 으로 잡으면 적어도 동독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이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1:1 의 교환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동독에서 자금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독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일종의 „선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한 예로 천억마르크의 10 년 상환 채권을 발행하거나 연방은행의 이익을 사용하는 것, 서독 정부의 국방비 예산을 약 100 억 마르크 감축하는 방안, 기업의 재산에 대한 세금, 계획된 기업의 세금 인상분 중에 약 삼백억 마르크를 포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과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동독의 정치범을 도와주는 것이 그 원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때문에 이주하고 있다.

출처: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Prof. Dr. Rudolf Hickel, Universität Bremen 17.2. 1990

STATT WAHRUNGSUNION EINE MITTELFIRSTIGE STRATEGIE DER
DDR-SANIERUNG: WAS KOSTET UND WER BEZAHLT DIESES PROJEKT ?
(Vortrag Anfang März an der Humboldt-Universität)

1. Währungsunion sofort: DM-Illusionen statt aktiver Umge-
staltung

Risikantes währungspolitisches Neuland

Die ökonomische, ökologische und soziale Rückständigkeit der Wirtschaft auf dem Gebiet der DDR, die durch den Zusammenbruch dieses Typs der Planwirtschaft endgültig deutlich geworden ist, kennzeichnet die Ausgangslage. Alle Konzepte, die sich jenseits akademischer Modellbastelei und irrealer politischer Intentionen der Aufgabe stellen, die DDR-Wirtschaft auf einen Pfad sozial und ökologisch hochwertigen Wirtschaftens zu lenken, müssen die folgenden Tatsachen berücksichtigen. Zum einen gibt es bisher keine nutzbaren historischen Erfahrungen über einen vergleichswisen schnellen und grundlegenden Umbau einer derartigen Kommandowirtschaft. Die Vergleiche mit dem Start der Bundesrepublik nach dem Zweiten Weltkrieg lassen sich wegen der völlig unterschiedlichen historischen Bedingungen sinnvollerweise nicht anstellen. Zum anderen erfolgt dieser Umbau unter dem wachsenden Druck der Übersiedlung. Die mittlerweile ausschließlich durch das deutsch-deutsche Wirtschaftsgefälle erzeugte Wanderungsbewegung aus der DDR bewirkt einen zeitlichen Lösungsdruck, der eine rationale Umbaustrategie kaum noch zuzulassen scheint.

Der Forderung nach der sofortigen Verwirklichung einer deutschen-deutschen Währungsunion, auf deren Basis dann erst die Wirtschaftsintegration beschleunigt werden soll, läßt ökonomische Vernunft vermissen. Mit der Schaffung dieser Währungsunion verbindet sich die Hoffnung, die DM als neue Währung im Gebiet der bisherigen DDR könnte eine entscheidende Vertrauensgrundlage für das dortige Wirtschaften sichern. Unbestreitbar stellt die Akzeptanz einer stabilen Währung, wie internationale Erfahrungen zeigen, eine ordnungspolitische Rahmenbedingung hohen Ranges dar. Durch die vorrangige Einführung der Währungsunion zeichnen sich jedoch jetzt schon vermeidbare Fehlentwicklungen ab. Die Risiken dieser Integrationsstrategie lassen sich auf folgenden Fel-

dern sichtbar machen:

Währungsunion heißt, daß in einem ersten Schritt die DDR-Mark durch die BRD-Mark ersetzt wird. Damit verliert die DDR nicht nur ihre währungs-, sondern weit darüber hinaus auch ihre finanz- und wirtschaftspolitische Souveränität. Die Diskussion, wie gegenüber dem bisher offiziellen Wechselkurs 1 Ost-Mark gleich 1 West-Mark (bzw. dem Schwarzkurs 10 : 1) ein dem industriellen Gefälle entsprechender Wechselkurs zu definieren ist, wird hinfällig. Der Wechselkurs als Puffer zwischen dem industriellen Gefälle der beiden dann noch selbständigen Wirtschaftsräume verliert seine Funktion. Der internationale Konkurrenzdruck schlägt voll auf die DDR-Wirtschaft durch. Der damit entstehende Anpassungsdruck läßt einen sozial flankierten Umbau der Wirtschaft kaum zu.

Umtausch am Tag X und die Folgen

Wird die Ost- durch die West-Mark ersetzt, dann reduziert sich die Frage der Wechselkurse auf die Festlegung eines einmaligen Umtauschsatzes für das bisherige Bargeld sowie die Geldvermögensanlagen am Tag X. Nach dem Tag X werden dann die künftigen Kostenrechnungen sowie die Einkommenszahlungen auf der Basis von Arbeit und Eigentum und die Sozialeinkommen in DMark geleistet. Auf zwei Ebenen müssen deshalb die Folgen der Währungsunion untersucht werden:

a) Für die bisherigen Geldvermögensbesitzer entscheidend ist die Frage, in welchem Umfang die bisherigen Ost-Mark-Bestände in BRD-DMark ungetauscht werden. Das Volumen des gesamten Geldvermögens betrug 1988 ca. 184 Mrd. Ost-Mark. Vorstellbar wäre, daß das Bargeld in den Händen der privaten Haushalte (ca. 16 Mrd. Ost-Mark 1988) über die Umtauschrelation 1:1 in DMark eingetauscht wird. Bei den Sparguthaben mit ca. 152 Mrd. Ost-Mark sollte unter dem Regime einer Währungsunion ebenfalls ein Umtausch von 1:1 realisiert werden. Die Pläne, lediglich einen Sockelbetrag von etwa 1000 Ost-Mark voll in DMark, jedoch höhere Beträge stufenweise immer ungünstiger umzutauschen, sind abzulehnen. Denn bei dieser Geldvermögensbildung handelt es sich vorwiegend um ein "Zwangssparen", d.h. sie kam größtenteils wegen unzureichender Konsumtionsmöglichkeiten zustande. Es wäre sozial unverantwortlich, hier jetzt auch noch eine Entwertung im Rahmen eines Währungsschnitts vorzunehmen. Beim Umtausch des gesamten DDR-Geldvermögens im Verhältnis 1:1 würde die 1988

geltenden Geldmenge M 3 (bei den Nichtbanken: Bargeld, Sichteinlagen, Termineinlagen und Sparkonten unter gesetzlichen Bedingungen) um ca. 15% ausgeweitet. Die sich möglicherweise bei vollem Umtausch ergebende inflationäre Entwicklung der DMark könnte jedoch durch zwei Einflüsse abgeschwächt werden: Vorzugsweise den bisherigen Besitzern von Geldvermögen wäre der Kauf von Anteilen am bisherigen Staatsbesitz (Grundeigentum, Immobilien, Industriebeteiligungen) sowie staatlicher Finanzierungspapiere anzubieten. Die dadurch erzielten DMark-Beträge ließen sich bei der Staatsbank der DDR stilllegen und damit dem volkswirtschaftlichen Kreislauf entziehen. Weiterhin müßten durch die Sicherung eines qualifizierten Konsumwarenangebots auch die Möglichkeit, diese DMark-Beträge auszugeben, gewährleistet werden. Die Währungsunion kann also nur gelingen, wenn gleichzeitig sich die Güter- und Dienstleistungsangebote ausweiten.

Die mit dem unverzüglichen Umtausch des Geldvermögens in DM-Werte verbundenen Folgeprobleme machen das Dilemma einer Währungsunion sichtbar. Nur wenn die gleichzeitige Verbesserung der Versorgung sowie eine sozial gerechte Privatisierung eines Teils des bisherigen Staatsvermögens gesichert wird, lassen sich die Inflationsprobleme bzw. ein erneuter Geldüberhang einigermaßen vermeiden. Werden jedoch diese Maßnahmen nicht unverzüglich eingeleitet, dann droht die Gefahr, daß die DM-Kaufkraft durch Einkaufsreisen oder gar als Startkapital für weitere Übersiedelungen in die BRD gelenkt wird.

Fließen im vollen Ausmaß des Umtauschs des Geldvermögens die DM-Beträge in die BRD zurück, dann drohen durch die Ausweitung der Geldmenge M 3 um über 15 % ^{in Kaufkraft} Gefahren. Zumindest könnte sich die Deutsche Bundesbank wegen dieser starken Abweichung von ihrem Ziel der Ausweitung der Geldmenge M3 zwischen 4 und 6% in 1990 zu restriktiven Maßnahmen, die die ökonomische Entwicklung hier belasten, veranlaßt sehen. Steigende Zinsen infolge restriktiver Geldpolitik würden dann noch die Nutzung privater und öffentlicher Kredite in der DDR verteuern.

b) Neben der Denominierung des bisherigen Geldvermögensbestands in der DDR in DMark müssen im Rahmen der Schaffung einer Währungsunion auch die künftigen Einkommenszahlungen sowie Kostenrechnungen auf DMark umgestellt werden. Durch

die DMark-Umrechnung wird einerseits das Gefälle der Produktivität, d.h. des Beitrags einer Arbeitsstunde zur Produktion sichtbar. Nach bisher vorliegenden Berechnungen liegt die Produktivität in der DDR ca. um die Hälfte niedriger als die in der BRD. Andererseits schlagen sich die massiven Produktivitätsrückstände auch in entsprechend niedrigeren Lohneinkünften sowie Sozialeinkommen - etwa für Rentner - nieder. Die Risiken einer Währungsunion ohne eine aktive Politik wirtschaftlicher Sanierung lassen sich je nach Anpassungsreaktion in folgenden Zusammenhängen deutlich machen:

+ Solange dem Bezug von Löhnen und Sozialeinkommen "vor Ort" kein quantitativ und qualitativ ausreichendes Angebot an Konsumgütern und -dienstleistungen gegenübersteht, verschlechtert sich eher die Lage. DM-Kaufkraft konzentriert sich auf die BRD. Ein entscheidender Grund für die Übersiedlung, nämlich die Lohneinkünfte nicht konsumtiv zufriedenstellend nutzen zu können, würde sich verstärken.

+ Die Auszahlung der Löhne in DMark offenbart endgültig das große Lohngefälle. Das durchschnittliche Monatseinkommen eines Arbeitnehmers in der DDR liegt - auf der Basis einer Umrechnung von 1:1 - bei 1 100 DM, während dieses in der BRD mit 3 300 DM drei Mal so hoch ausfällt. Ist jedoch in absehbarer Zeit ein Abbau des Lohngefälles nicht zu erwarten, dann ist es - durchaus auch im Sinne der neoklassischen Entscheidungslogik-rational, in die Bundesrepublik übersiedeln. Die Währungsunion verstärkt im Widerspruch zur Zielsetzung der Bundesregierung somit das Motiv zur Übersiedlung in das "Hochlohnland" Bundesrepublik. Dieses Lohngefälle sowie die damit verbundene Gefahr weiterer Abwanderung werden jedoch relativ schnell den Druck, die Löhne in der DDR zu erhöhen, ^{besteht} / Derartige Lohnzuwächse wären jedoch im produktionswirtschaftlichen Bereich zumindest für die kurze Frist nicht durch eine entsprechende Steigerung der Produktivität gedeckt. Würden allerdings bei niedrigerer Produktivität die Lohnsätze stärker steigen, dann wäre ein weiterer Verlust der internationalen Konkurrenzfähigkeit vorprogrammiert. Die Exportchancen müßten sinken; der Zufluß ausländischen Kapitals nähme ab. Schließlich ist bei den Arbeitnehmern trotz des Anstiegs der Nominallohne eine Reallohnverlust wahrscheinlich. Werden die bisherigen Preis-subsidien in Höhe von ca. 50 Mrd. Ost-Mark ohne Ausgleichsmaßnahmen abgebaut, dann sind zwei Entwicklungen vor-

steckbar: Entweder müssen die Reallohnverluste hingenommen werden. Auch das würde das Motiv, in die BRD übersiedeln, steigern. Oder aber es kommt bei den Lohnerhöhungen zu einem sich aufschaukelnden Wettlauf zwischen der Angleichung des Nominallohngefälles gegenüber der BRD und dem Ausgleich der Reallohnverluste infolge des Abbaus der bisherigen Preissubventionen. Durch die unmittelbare Einführung der Währungsunion gerät die Lohnpolitik unter den Druck einer gefährlichen Veralterung, die den notwendigen, produktivitätssteigernden Umbau der Wirtschaft behindert.

Die Einsicht, daß die Lohnerhöhungen zum Ausgleich des Gefälles gegenüber der BRD sowie der Kaufkraftverluste durch den Abbau der Preissubventionen zu schwerwiegenden Entwicklungsproblemen in der DDR führen können, legt den Gedanken nahe, das Lohngefälle zumindest vorübergehend über einen Finanzausgleich durch die öffentlichen Haushalte der BRD zu überspielen. Um den durchschnittlichen Lohnabstand nach Abzug der öffentlichen Abgaben von derzeit ca. 1 300 DM im Monat für ca. 9,5 Mio. Erwerbstätige in der DDR auszugleichen, ergäbe sich allein für einen Monat ein Finanzbedarf von ca. 12 Mrd. DM. Über das Jahr gerechnet müßten 144 Mrd. DM aufgebracht werden. Eine derartige Globalfinanzierung des Lohnausgleichs durch die Bundesrepublik ist ökonomisch und fiskalisch wenig sinnvoll. Eine dringend erforderliche Koppelung der Lohnentwicklung an die Verbesserung der Produktivität der DDR-Wirtschaft würde völlig verdeckt. Die Mittel zur Finanzierung des Umbaus der Wirtschaft sowie der Infrastruktur würden dadurch unzulässig eingeschränkt. Schließlich wäre es zweifelhaft, ob trotz dieses Lohnausgleichs die Übersiedlung gestoppt würde, wenn nicht gleichzeitig auch ein hochwertiges Konsumgüterangebot garantiert werden könnte. Diese Kritik an Plänen zu einem Globalausgleich des Lohngefälles schließt jedoch nicht die Notwendigkeit aus, gezielte Lohnzuschüsse aus öffentlichen Mitteln der Bundesrepublik zu finanzieren, wenn dadurch der Aufbau des Mittelstands gefördert ^{und} in Schlüsselbranchen die Beschäftigungslage verbessert werden kann.

Durch eine Übernahme der DMark wird dem Lohngefälle vergleichbar auch das niedrige Niveau der Sozialeinkommen, das Rentner beziehen, sichtbar. Eine Anhebung der Renten drängt sich nicht nur wegen dieses Gefälles, sondern auch infolge der Kaufkraftverluste durch den Abbau der Preissubventionen auf. Als wichtigster Reformschritt müssen diese Sozialein-

kommen an die Nettolohnentwicklung angekoppelt werden. Durch diese Dynamisierung wird eine Teilhabe an den Lohnerhöhungen im Ausmaß der Produktivitätssteigerung und des Preisausgleichs gesichert. Zugleich muß ein System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aufgebaut werden. Denn sicher ist, daß eine produktivitätssteigernde Umstrukturierung der Wirtschaft unter dem Druck der internationalen Konkurrenz die bisher verdeckte Arbeitslosigkeit sichtbar machen wird und die Zahl der Arbeitslosen im Rahmen unvermeidbarer Betriebstillen massiv ansteigen läßt. Derzeitige Schätzungen zur beschäftigungsspezifischen Wirkung der DDR-Sanierung gehen von einem Anstieg der Zahl der Arbeitslosen auf 2 - 2,5 Mio. aus. Für eine Übergangsphase muß die Finanzierung dieser Arbeitslosenversicherung durch die Bundesrepublik übernommen werden. Das ist der Preis, der für den Abbau des ökonomischen Gefälles und damit die Wirtschaftsannäherung aufzubringen ist.

Erstes Fazit: Auf dem entwicklungsrelevanten Gebiet der Lohnpolitik wird deutlich, daß die schnelle Einführung der Währungsunion und damit die Umstellung von Ost- auf West-Mark dringend erforderliche Anpassungsprozesse erschwert und Risiken hervorruft. Der Spielraum der Einkommensverteilung wird durch den produktivitätssteigernden Umbau der Wirtschaft, begleitet von sozial-ökologischen Infrastrukturmaßnahmen, bestimmt. Deshalb kommt es darauf an, diese Umbaumaßnahmen aus der Bundesrepublik finanziell zu unterstützen. Eine solide Basis für eine Politik der Lohnausweitung und - vermittelt über die öffentlichen Haushalte - der indirekten Sozialeinkommensicherung kann auf Dauer nur durch eine Verbesserung der sozial-ökologisch kontrollierten Produktionsbedingungen geschaffen werden. Während also der direkte und indirekte Einkommensbezug auf Dauer an die Entwicklung des Produktionssystems gebunden werden muß, schafft dieses gleichzeitig auch güterwirtschaftlich die Produktion, die auf den eigenen Märkten angeboten werden kann. Soweit daraus Warenlieferungen in andere Regionen bzw. ins Ausland bestritten werden können, erweitert sich der Spielraum für Importe von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in den Wirtschaftsraum der bisherigen DDR. Ein derartiges, über dieses Wirtschaftsgebiet hinaus agierendes Regionalmodell kann durchaus einen sozial-ökologisch kontrollierten Wirtschaftsaufschwung auslösen. Ein sofortiger Einstieg über die Währungsunion verhüllt jedoch die Reformaufgaben im Produktions-, Verteilungs- und Produktionssystem durch einen DM-"Geldschleier"

Aktive Sanierungspolitik statt Hoffen auf die "stumme Gewalt" der BRD-DMark

Eine Währungsunion kann angesichts des starken ökonomischen Gefälles sowie des dringenden Um- und Ausbaubedars kaum einen geordneten Prozeß in Richtung Stärkung des Wirtschaftsraums DDR bewirken. Denn diese Vorgehensweise erhöht den Zeitdruck. Die Risiken unkontrollierter Kostenexplosion sind hoch. Selbst wenn am Ende eine volle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Integration gewollt wird, so müßte anstatt der sofortigen Währungsunion ein alternativer Entwicklungspfad mit den folgenden Elementen eingeschlagen werden:

- Einführung von Marktelementen bei gleichzeitiger Sicherung einer politisch legitimierten, starken Regulierung, um den sozialen und ökologischen Umbau zu steuern und ökonomische Machtkonzentration zu verhindern;
- Schaffung gesetzlich streng regulierter Finanzierungsinstitutionen (zweistufiges Bankensystem);
- Abbau des bisherigen Systems der Preissubventionierung bei Sicherung sozialer Ausgleichsmaßnahmen;
- Produktivitätsstärkenden Maßnahmen im Unternehmensbereich durch schnelle Zurverfügungstellung von hochwertigen Investitionsgütern und Umwelttechnologien - im Sinne 'vorfinanzierter' Realtransfers aus der Bundesrepublik und dem Ausland;
- Öffentliche Hilfe aus der Bundesrepublik beim Aufbau eines Warendistributionssystems, um mit den Einkommen 'vor Ort' auch einen Zugang zum Angebot von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schnell zu schaffen;
- Bundesrepublikanische Vorfinanzierung der Produktionsaktivitäten, die zum Ausbau der öffentlichen Infrastruktur (Umwelt, Verkehrssystem und Kommunikation) erforderlich sind.

Währungspolitische Optionen müssen danach beurteilt werden, inwieweit sie besser geeignet sind, diese Aufgaben des Wirtschaftsbaus zu unterstützen. Auch unter dem Ziel, eine deutsch-deutsche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Integration

zu wollen, gibt es überhaupt keinen rationalen Grund für eine sofortige Währungsunion. Die Bewältigung der hier definierten Aufgaben muß in den Vordergrund gestellt werden. Zu hoffen, diesen güter- und finanzwirtschaftlichen Umbau der alles regelnden "stummen Gewalt" der DMark überlassen zu können, schafft vermeidbare, politische und ökonomische Entwicklungsbarrieren. Ein den bundesrepublikanischen Verhältnissen vergleichbares Entwicklungsniveau kann nach seriösen Berechnungen erst nach fünf bis zehn Jahren erreicht werden. Zumindest für die erste Phase des Umbaus der DDR-Wirtschaft sollte deshalb der bisherige Wirtschaftsraum der DDR nicht den währungspolitischen Bedingungen der Bundesrepublik untergeordnet werden. Vorstellbar wäre die Fixierung eines Wechselkurses, der jedoch durch die Deutsche Bundesbank mit garantiert werden muß. Realistisch scheint derzeit ein Wechselkurs von 1 West-Mark zu 3 Ost-Mark. Dieser Wechselkurs könnte dazu beitragen, das derzeit starke Wirtschaftsgefälle abzufedern. Gegenüber dem bisher offiziellen Umtauschkurs von 1:1 würden damit Exporterlöse erzielbar. Der Importdruck auf die Binnenwirtschaft ließe sich durch diesen Wechselkurs in der Anlaufphase reduzieren. Eine schrittweise Zurückführung dieses Wechselkurses sollte in Abhängigkeit vom Abbau des Wirtschaftsgefälles auf 1:1 vorgesehen werden. Bei dieser Wechselkursrelation 1:1 wären dann schließlich die realwirtschaftlichen Voraussetzungen gegeben, eine gemeinsame Währung für die beiden Wirtschaftsräume einzuführen. Gegenüber diesem Stufenplan, an dessen Ende die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stehen kann, trifft auch der Einwand nicht zu, der Zeitdruck verlange eine sofortige Währungsunion. Zum einen kann eine durch die Bundesrepublik garantierte Wechselkursstabilität bei voller Währungskonvertibilität das dringend erforderliche Vertrauen in die Währung herstellen. Zum anderen vermag die sofortige Einführung der DMark als Währung in der DDR die realwirtschaftlichen Entwicklungsprobleme nicht zu lösen. Im Gegenteil, die Übersiedlung wird wegen des sichtbaren Lohngefälles weiter zunehmen. Schließlich lauert in den durch die Währungsunion ausgelösten, unkontrollierten Anpassungsreaktionen die Gefahr einer Kostenexplosion. Dieses Modell der schrittweisen Sanierung der DDR-Wirtschaft reserviert gegenüber der sofortigen Übernahme der DMark auch noch einen politischen Gestaltungsspielraum, der genutzt werden muß, um die DDR-Bevölkerung und ihre politischen Instanzen an der Gestaltung zu beteiligen.

2. Sanierungskosten der DDR-Wirtschaft und ihre Finanzierung

Allgemeines "Notopfer" - untauglich

Die sofortige Einführung der Währungsunion wird - diese These ist hier entwickelt worden - zu einer unkontrollierbaren Kostenexplosion und vermeidbaren entwicklungshinderlichen Anpassungsreaktionen führen. Dazu nochmals das Beispiel: Die sofortige Übernahme der DMark macht das produktivitätsbedingte Lohngefälle sichtbar. Daraus ergibt sich entweder die Forderung nach einem Finanzausgleich oder aber nach schnellen Lohnerhöhungen zum Abbau dieses Gefälles sowie zur Kompensation der Kaufkraftverluste infolge des Abbaus der Preissubventionen. Die DDR würde einem unmittelbarem internationalem Konkurrenzdruck ausgesetzt, der Lohnerhöhungen ohne Produktivitätsanstieg nicht zuließe. Die Folge wäre ein rascher Anstieg der Arbeitslosigkeit, die wiederum zu Forderungen nach einem bundesrepublikanischen Finanzausgleich führen müßte. Vor allem aber würde eine weitere Abwanderung nicht verhindert. Erforderlich ist daher ein geordnetes Verfahren, das einerseits eine Umbauperspektive festlegt und andererseits jedoch auch Zeit schafft, um diesen Prozeß abzufedern.

Der Wirtschaftsraum DDR ist jedoch nicht in der Lage, die Kosten einer schrittweisen Sanierung aus eigener Kraft aufzubringen. Dabei ist es wichtig, die Finanzierungsfrage nicht auf den einseitigen Fluß von Geldströmen zu reduzieren. Die Zurverfügungstellung von Finanzmassen dient der Aufgabe, damit dringend benötigte Güter- und Dienstleistungen bezahlen zu können. Der Finanztransfer ist also nur insoweit gerechtfertigt als damit auch ein Realtransfer verbunden ist.

Felder der Finanzierung

Die Finanzierung dieses Realtransfers konzentriert sich auf die folgenden Felder:

- Umbau und Sanierung der bisherigen Produktionsstätten durch den Einsatz hochwertiger Anlageinvestitionen sowie von Umwelttechnologien;
- Öffentliche Infrastrukturmaßnahmen in den Bereichen Ver-

kehrssysteme, Umweltsanierung (vor allem Abbau von Altlasten), Aufbau umweltverträglicher Energiesysteme sowie der Kommunikation;

- Starthilfen zum Aufbau einer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 nach dem Muster zinsverbilligter Kreditvergabe sowie durch Lohnkostenzuschüsse;

- Finanzierung von Einkommenstransfers im Rahmen des Ausbaus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sowie der Angleichung der Renten.

Soweit in der Übergangsphase ein Wechselkurs politisch fixiert und garantiert wird, muß die Deutsche Bundesbank DMark im Rahmen von Stützungskäufen aufbringen. Diese Aktivitäten belasten nicht unmittelbar die öffentlichen Haushalte der Bundesrepublik. Eingesetzt werden muß hier ein Devisenfonds. Einer drohenden Abwertung der Ost-Mark muß die Bundesbank in Absprache mit der Staatsbank in der DDR durch die Nachfrage nach Ost-Mark und damit dem Angebot an West-Mark entgegenwirken. Die Sicherung der Preisstabilität wird hierbei jedoch zu berücksichtigen sein.

Die Schätzungen über den Finanzierungsbedarf dieser Sanierung auf den hier genannten Feldern belaufen sich auf weit über eine Billion. Genaue Zahlenangaben hier zu machen, wäre unseriös. Sie gleichen eher einem Totschlägerargument. Es kommt vielmehr darauf an, eine absehbare Anfangsfinanzierung in der Gegend von 50 Mrd. DM festzulegen, die dann auch auf der Basis sich verändernder ökonomischer Entwicklungsbedingungen fortgeschrieben bzw. korrigiert werden kann.

Um hier eine geordnete Aufbringung zu sichern, sind die folgenden Prinzipien zu berücksichtigen:

Grundsätze der Finanzierung

- Zu betonen ist die Tatsache, daß es sich im Prinzip um eine "Vorfinanzierung" handelt, d.h. im Zuge der wirtschaftlichen Sanierung schrumpft der Finanzierungsbedarf und allmählich können auch die vorab aufgebrauchten Mittel an die Geldgeber wieder zurückfließen. Mut zur Finanzierung mit langen Fristen wird verlangt. Hier ist der historische Vergleich mit der Bundesrepublik zulässig. Die Finanzierung des Aufbaus der bundesrepublikanischen Wirtschaft nach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die erheblich mehr Mittel verschlang, ist heute noch nicht endgültig abgewickelt.

- Finanziert werden müssen, darauf wurde schon hingewiesen, Realtransfers, d.h. der Einsatz hochwertiger Güter im privatwirtschaftlichen und öffentlichen Bereich. Die Einkommenstransfers gelten für den Übergang dem Ziel, soziale Härten abzufedern und den Zugang zur Konsumtion zu verbessern.

Wer soll das bezahlen?

- Die Debatte um diese Vorfinanzierung in der Bundesrepublik muß auf die Beantwortung der Frage, von wem diese Mittel aufgebracht werden sollen, gelenkt werden. Forderungen nach einem allgemeinen "Notopfer" oder aber einem Verzicht auf Tariflohnerhöhungen zielen in die falsche Richtung. Sie tragen eher zur Schaffung eines irrationalen Klimas bei. Die Forderung der Unternehmerverbände nach einem Aussetzen tarifpolitischer Vereinbarungen zum weiteren Abbau der Arbeitszeit sind auch aus der Sicht der ökonomischen Entwicklungsprobleme nicht gerechtfertigt. Diese Forderung impliziert die Vorstellung, die Produktionsleistungen zur Sanierung der DDR-Wirtschaft müßten ausschließlich im bundesrepublikanischen Wirtschaftsraum erbracht werden. Vorrangig kommt es jedoch darauf an, die Produktionsaktivitäten auf die DDR zu konzentrieren. ^{aus DDR} Schließlich führt es zu einer gefährlichen Irrationalisierung, wenn medienwirksam Einzelne nach ihrer individuellen Opferbereitschaft gefragt werden. Die Verteilung der Finanzierungslasten muß an den bisherigen Einkommens- und Besitzverhältnissen sowie den öffentlichen Ausgaben- und Einnahmenströmen ansetzen.

- Weiterhin sind für die Vorfinanzierung dieses Sanierungsprojekts eigenständige Quellen zu erschließen. Damit wird der Forderung, diese Aufgaben im Rahmen eines Finanzausgleichs im erweiterten föderalen Bundesstaat aufzubringen, nachhaltig widersprochen. Zum einen passen die Aufbringungs- und Verteilungskriterien des bisherigen horizontalen und vertikalen Finanzausgleichs nicht auf dieses Aufgabenprofil. Derzeit schon notleidende Bundesländer sowie die Stadtstaaten gerieten zum anderen weiter ins Hintertreffen. Schließlich wird durch eine gezielte Finanzierung deutlich, daß zu deren Verwirklichung eigenständige Entscheidungs- und Kontrollgremien, die die Interessen der Bevöl-

T* Dabei darf nicht übersehen werden, daß in einer Anpassungsphase die DDR hochwertige Investitionsgüter (Realtransfers) zugeführt werden müssen, da diese dort defizitwirtschaftlich erbracht sind.

kerung im Wirtschaftsgebiet der DDR berücksichtigen, einzurichten sind.

- Gefunden werden muß ein verträglicher Finanzierungsmix. Weder die öffentliche Kreditfinanzierung - so etwa der Bundesfinanzminister - noch die Erhöhung der öffentlichen Abgaben allein sind geboten. Bei der Mischung der Finanzierungsinstrumente sind einerseits die Belastungswirkungen sowie andererseits die Auswirkungen auf die Geldwertstabilität gleichrangig zu berücksichtigen.

Bündel von Finanzierungsinstrumenten

Auf der Basis dieser Grundsätze lassen sich die folgenden Finanzierungsinstrumente vorschlagen:

+ Mit der Auflage einer langfristigen DM-Anleihe - etwa über 100 Mrd. DM - im In- und Ausland wird der Vorfinanzierungscharakter der DDR-Sanierung betont. Die Kurspflege wird durch das Bundesfinanzministerium wahrgenommen. Die jährlichen Zinszahlungen übernimmt in der Anfangsphase der Bundeshaushalt (bei 8 % pro Jahr 8 Mrd. DM). Die Tilgung dieser Anleihe sollte erst nach zehn Jahren einsetzen.

+ Die Bundesbankgewinne, deren Höhe zwar nicht vorgegeben ist, sollen künftig voll der Finanzierung der DDR-Sanierung zugeführt werden.

+ Die Verringerung der Ausgaben im Rahmen des Verteidigungs- bzw. Rüstungshaushalts um 10 Mrd. DM und deren Nutzung für die DDR ist ökonomisch und politisch geboten.

+ Eine Abgabe auf das unternehmerische Produktivvermögen in der Bundesrepublik sollte vorgesehen werden. Denn aus den daraus finanzierten Sanierungskosten im Unternehmensbereich der DDR sowie zur Verbesserung der Infrastruktur zieht der Unternehmensbereich ^{schon in der BRD} künftig auch großen Nutzen. Auf die geplante neue Stufe der Senkung von Unternehmensteuern um ca. 30 Mrd. DM ist vollständig zu verzichten.

+ Die öffentliche Kreditaufnahme sollte nur so eingesetzt werden, daß sich daraus keine Geldentwertung sowie keine starken Belastungen der Kapitalmärkte ergeben. Dabei müßte die Kreditaufnahme mit der Geldpolitik koordiniert werden.

+ Soweit die bisher vorgeschlagenen Finanzmittel nicht ausreichen, ist eine Ergänzungsabgabe zur Einkommensteuer ab einem zu versteuernden Jahreseinkommen von 60 000 DM/1200 00 DM (Ledig/Verheiratet) sowie generell zur Körperschaftsteuer vorzusehen.

Es kommt jetzt darauf an, derartige Rahmenpläne zur Vorfinanzierung der Sanierung der DDR-Wirtschaft ideologiefrei zu diskutieren. Denn nur so läßt sich eine rationale Basis in der finanzpolitischen Diskussion zurückgewinnen. Die zum Teil aus Unsicherheit resultierenden Ängste könnten verringert und das politische Klima für diese schwierigen Aufgaben verbessert werden. Zu diesem Finanzierungspaket gehört jedoch auch die Aufgabe, die bisherigen finanziellen Sonderleistungen für Übersiedler abzubauen. Bei der Einführung dieser Sonderleistungen wurde vom Status politisch Verfolgter ausgegangen. Heute handelt es sich jedoch um eine aus dem Wirtschaftsgefälle begründete Wanderung. Wenn nicht die fiskalischen Anreize für diese Wirtschaftswanderung abgebaut werden, ergibt sich eine politisch explosive Doppelbelastung der Bundesrepublik: Während die ökonomischen Entwicklungschancen der DDR durch diesen "Aderlaß" verschlechtert werden und deshalb die Finanzanforderungen ansteigen, kommen weit über die Finanzierung hinaus in der Bundesrepublik Belastungen zustande, die das gesamte Sanierungsprojekt DDR empfindlich bedrohen können.

문서 번호 21

슈타르크(Stark) 실장의 메모

1990 년 3 월 6 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청

내용:

이 문서는 “화폐통합의 달성, 재정문제” 정책그룹 - 정책그룹의 팀장인 서독 연방재무부의 슈타르크 국장이 당시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 (호스트 쾰러는 그 후에 세계은행총재를 거쳐 독일연방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과 화폐문제를 담당할 실무그룹과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2 차례 전문가회의가 열렸고 동독 측에서 이 회의에 아주 협조적이었다. 전문가그룹과 실무그룹의 업무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비공개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출처: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 41-.68018 De 2 Bd. 8. -Az.42 - 35006 - De 13.)

Nr. 209
Vermerk des Regierungsdirektors Stark
Bonn, 6. März 1990

BArch, B 136/23744, 41 – 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Betr.: Arbeitsgruppe „Bildung einer Währungsunion, Finanzfragen“

Der Vorsitzende der Arbeitsgruppe, Sts Dr. Köhler, wird berichten.

1. Allgemeine Bewertung

Die Arbeitsgruppe „Bildung einer Währungsunion, Finanzfragen“ wird von den Arbeiten der Gemeinsamen Expertenkommission überlagert und bestimmt. Der Bericht des BMF¹ konzentriert sich daher zu Recht auf die Beratungen der Expertenkommission sowie deren Arbeitsgruppen zu den Bereichen Währung, Wirtschaft, Finanzen, soziale Sicherung. Die Expertenkommission und die Arbeitsgruppen haben zielführend gearbeitet und bereits sichtbare Fortschritte erzielt. Die DDR arbeitet nicht nur konstruktiv an der Klärung der erforderlichen Fakten und Daten mit, sondern ist auch bereit, aktiv an der Lösung der sehr schwierigen Fragen mitzuwirken.

2. Inhalt

Die Expertenkommission hat bis jetzt zweimal getagt. Grundlage war ein Fragenkatalog, in dem die erforderlichen wirtschaftlichen und finanziellen Daten und Fakten erfaßt sind. Die anlässlich des ersten Treffens gebildeten Arbeitsgruppen haben sich inzwischen mehrfach zu Beratungen getroffen.

¹ Bericht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an den Kabinettsausschuß Deutsche Einheit, M/AIB/38.1–38.9/SCHE, 5. März 1990; BArch, B 136/23744, 41 – 68018 De 2 Bd. 7.

Arbeitsgruppe Wirtschaft

In dieser Arbeitsgruppe wurden Fragen einer konsolidierten Bilanz des DDR-Kreditsystems, der internen Schuldner-Gläubiger-Verhältnisse und Fragen der Zahlungsbilanz der DDR erörtert sowie einer ersten ökonomischen Bewertung unterzogen.

Zentrales Anliegen der DDR-Seite war wiederholt die Frage des Umstellungssatzes der Mark der DDR zur D-Mark. Von unserer Seite wurde dazu betont, daß diese Frage erst am Ende des gesamten Klärungsprozesses entschieden werden könne.

Arbeitsgruppe Finanzen

Im Vordergrund standen die Bestandsaufnahme des DDR-Staatshaushalts, Fragen des Haushalts- und Steuerrechts sowie der Haushaltsorganisation und Steuerverwaltung.

BMF erarbeitet derzeit ein Modell des DDR-Staatshaushalts nach Einführung eines gemeinsamen Währungs- und Wirtschaftsraumes und die daraus resultierenden Auswirkungen auf den Bundeshaushalt.

Arbeitsgruppe Wirtschaft

Die DDR hat bereits erste Antworten auf den Fragenkatalog zu gesamtwirtschaftlichen Daten und Wirtschaftsreformen vorgelegt. Sie äußerte sich sehr kritisch zur Wettbewerbsfähigkeit der DDR-Wirtschaft für den Fall, daß marktwirtschaftliche Regelungen ohne Übergangsfristen eingeführt werden.

Arbeitsgruppe soziale Sicherung

Erörtert wurden statistische Grundlagen und die Übertragbarkeit von Grundsätzen und Regelungen unseres Systems der sozialen Sicherung auf die DDR. Großes Interesse bestand an der Einführung einer beitragsfinanzierten Arbeitslosen- und Rentenversicherung.

3. Ggf. zu erörternde Punkte

- Bestätigung der strengen Vertraulichkeit der Arbeiten der Expertenkommission.
- Zur Frage des Umstellungssatzes DDR-Mark/D-Mark sollte größte Zurückhaltung geübt und jede weitere öffentliche Diskussion vermieden werden.
- Frage der weiteren Termin- und Arbeitsplanung bis zum 18. März.

문서 번호 22

동독 중앙은행 개정법

1990 년 3 월 6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국가평의회

내용: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도입한 동독의 중앙은행법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1974 년 12 월 19 일에 제정되었던 중앙은행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중앙은행법에 따라 동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의 국가기준은행으로 국채와 국가경제의 회계기구가 된다. 국가의 중앙은행은 화폐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시중은행과 저축금고에 대한 은행감사 또한 중앙은행의 업무에 속한다. 동독 내에 다른 국가의 은행이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도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장은 통화 화폐정책 및 대출정책의 실현에 관한 법안을 제안할 권리도 갖는다.

출처: DDR-Gesetzblatt 1990 I/16, 125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25

1990

Berlin, den 12. März 1990

Teil I Nr. 16

Tag	Inhalt	Seite
6. 3. 90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25
7. 3. 90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DR über staatliche Pflichten zum Schutz und zur Förderung von Kultur und Kunst	126
6. 3. 90	Beschluß des Staats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Durchführung der Wahlen zu den Kreistagen, Stadtverordnetenversammlungen, Stadtbezirksversammlungen und Gemeindevertretungen	127
9. 3. 90	Beschluß des Staats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Wahlen zu Kreistagen, Stadtverordnetenversammlungen, Stadtbezirksversammlungen und Gemeindevertretungen am 6. Mai 1990	127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6. März 1990**



Das Gesetz vom 19. Dezember 1974 über 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Bl. I Nr. 62 S. 580) wird wie folgt geändert:

§ 1

~~(1) Der § 1 Abs. 1 erhält folgende Fassung:~~

„(1) 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folgenden Staatsbank genannt) ist die Emission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as Kredit- und Verrechnungszentrum der Volkswirtschaft. Sie hat ihre Tätigkeit unter dem Gesichtspunkt der Stabilität der Währung durchzuführen, ist von Weisungen der Regierung unabhängig und arbeitet auf der Grundlage dieses Gesetzes.“

(2) Der § 1 Absätze 2 und 4 werden aufgehoben.

(3) Der § 1 Abs. 3 wird Abs. 2, Abs. 5 wird Abs. 3.

§ 2

Der § 2 Abs. 3 erhält folgende Fassung:

„(3) Aufgaben der Staatsbank gemäß den Absätzen 1 und 2 können Geschäftsbanken übertragen werden.“

§ 3

Der § 3 Abs. 1. 1. Satz erhält folgende Fassung:

„Die Staatsbank hat das alleinige Recht der Ausgabe von Geldzeichen (Banknoten und Münzen, einschließlich Sonder- und Gedenkmünzen) der Wäh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4

Der § 4 wird aufgehoben.

§ 5

Der § 10 erhält folgende Fassung:

„§ 10

~~Die Bankenaufsicht über die Tätigkeit der Geschäftsbanken und Sparkassen wird von der Staatsbank wahrgenommen.“~~

§ 6

Der § 11 erhält folgende Fassung:

„§ 11

Die Staatsbank erteilt die Genehmigung zur Bildung von Geschäftsbanken unabhängig von ihrer Eigentumsform. Die Errichtung von Repräsentanzen von Banken anderer Staaten auf de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darf der Zustimmung der Staatsbank.“

§ 7

Der § 12 Abs. 2 erhält folgende Fassung:

„(2) Der Präsident der Staatsbank wird vom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berufen. Er ist der Volkskammer rechenschaftspflichtig. Der ständige Stellvertreter des Präsidenten ist der Vizepräsident.“

§ 8

Der § 13 erhält folgende Fassung:

„§ 13

Zur Verwirklichung der Währungs-, Geld- und Kreditpolitik hat der Präsident der Staatsbank das Recht der Gesetzes-

initiative. Er ist berechtigt, an Sitzungen des Ministerrates mit beratender Stimme teilzunehmen, Vorlagen einzubringen und diese zu vertreten. Er erläßt Anordnungen und Anweisungen auf dem Gebiet der Währungs-, Geld- und Kreditpolitik.“

§ 9

Der § 14 Abs. 1 wird aufgehoben, Abs. 2 gilt ohne Absatz.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sechsten März neunzehn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ten März neunzehnhundertneunzig

**Der amtierende Vorsitzende des Staats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Prof. Dr. Gerlach

§ 10

Der § 18 Abs. 2 letzter Satz erhält folgende Fassung:

„Der Präsident der Staatsbank legt der Volkskammer den Jahresbericht vor und veröffentlicht ihn.“

§ 11

Dieses Gesetz tritt mit sein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DR
über staatliche Pflichten zum Schutz
und zur Förderung von Kultur und Kunst**

vom 7. März 1990

Zur Wahrung der Errungenschaften und Leistungen, die die Kultur und Kuns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ie deutsche Nationalkultur einbringen, und in Würdigung der Verdienste von Künstlern und Kulturschaffenden um die demokratische Erneuerung der Gesellschaft beschließt die Volkskammer in Übereinstimmung mit der Internationalen Konvention über wirtschaftliche, soziale und kulturelle Rechte vom 16. Dezember 1966, der UNESCO-Empfehlung über die Teilnahme und den Beitrag der Volksmassen am kulturellen Leben vom 26. November 1976 und der UNESCO-Empfehlung zum Status des Künstlers vom 27. November 1980 zum Schutz und zur Förderung von Kultur und Kunst:

1.

Der Ministerrat wird beauftragt, Entwürfe für Verfassungs- bzw. Gesetzesregelungen auszuarbeiten, die die staatlichen Pflichten und Verantwortlichkeiten zum Schutz und zur Förderung von Kultur und Kunst unter allen Bedingungen verbindlich fixieren. Bis zum Inkrafttreten solcher Regelungen sind die Grundsätze und Festlegungen dieses Beschlusses für alle Bereiche der staatlichen Legislative und Exekutive verbindlich.

2.

Alle Staatsmach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st dem Wesen und den Merkmalen eines Kulturstaates verpflichtet. Kultur und Kunst sind zu Grundwerten staatlicher Identität zu erheben, ihre Gewährleistung ist Staatspflicht, die freie Teilhabe an ihren Schaffensprozessen und an deren Ergebnissen Grundrecht aller Bürgerinnen und Bürger. Pflege und Schutz des nationalen Kulturerbes und des Gegenwartsschaffens sind gleichrangige Verpflichtungen des Staates.

3.

Kultur und Kuns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Bestandteil der deutschen Nationalkultur, der europäischen und der Weltkultur. Die Pflege des internationalen Kulturaustausches wird staatlich gefördert.

4.

Im Zuge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zu einer Marktwirtschaft sind bei deren Ausgestaltung neben sozialen und

ökologischen gleichrangig auch Orientierungen auf Wesensmerkmale eines Kulturstaates zu beachten; Kultur und Kunst, Städtebau und Architektur sind unverzichtbare Bestandteile der Lebensqualität und der Werteschöpfung in allen Gesellschaftsbereichen. Der Anspruch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auf eine kulturvolle Lebens- und Arbeitsumwelt ist als Grundrecht auszugestalten, das der Staat durch die Schaffung entsprechender Bedingungen und Einrichtungen sowie deren Unterhaltung, Pflege und Entwicklung gewährleistet.

5.

Die gewählten Volksvertretungen aller Ebenen fassen zur Förderung von Kultur und Kunst, deren Wissenschaften, des Laienschaffens, der Volkskunst sowie zur Förderung von Talenten Beschlüsse über die Schaffung materieller und geistiger Bedingungen; die Anteile der Aufwendungen für Kultur und Kunst am Haushalt sollen den durchschnittlichen Wert der letzten zehn Jahre möglichst nicht unterschreiten.

6.

Der Staat fördert die materielle und ideelle Unterstützung des Kulturlebens durch Wirtschaftseinheiten aller Eigentumsformen, Vereinigungen und andere juristische sowie natürliche Personen, die diese als Sponsoren oder in anderer Form erbringen. Materielle und finanzielle Leistungen zur Förderung von Kultur und Kunst sind durch steuerrechtliche und andere Vergünstigungen zu stimulieren.

7.

Eigentum, Besitz und Nutzung kultureller Güter durch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werden staatlich gefördert und geschützt. Kulturgüter, deren Erhaltung wegen ihrer Bedeutung für die Wissenschaft, die Geschichte und die Kultur im gesellschaftlichen Interesse liegt, sind nach zu schaffenden rechtlichen Regelungen von der Vermögen- und Erbschaftsteuer freizustellen.

8.

Der Staat fördert Verbände, die als nationale Interessenvertreter von Künstlern und Kulturschaffenden einen gesamtgesellschaftlich wirksamen Beitrag zur Entfaltung und Pflege sowie zur freien Ausübung und Wahrnehmung von Kultur und Kunst leisten und sichert ihre weitere Finanzierung möglichst im bisherigen Umfang aus dem Staatshaushalt. Staatliche Entscheidungen über Einkommens- und andere soziale Fragen, die die Tätigkeit von Berufskünstlern berühren, bedürfen der Abstimmung mit den betreffenden Verbänden. Den Künstlerverbänden ist das Recht auf angemessene Vertretung bzw. auf Gehör in allen staatlichen Or-

문서 번호 23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

1990 년 3 월 9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동독의 재무장관 발터 지거트, 연방감사원

내용:

이 문서는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동독을 대신하여 서독이 의무이행을 보장한다는 합의의 사본이다. 이 합의를 통해 채무보증절차, 연방감사국에 의한 검토와 행정적 검토 등이 합의되었다.

출처: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an die Obersten Bundesbehörden,
II A 3 - H 1360/8 - 1/90

5300 Bonn 1, 15. März 1990

II A 3 - H 1360/8 - 1/90

Graurheindorfer Straße 108

Telefon: (0228)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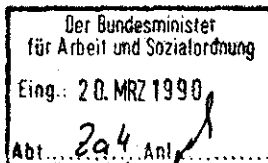
77 27

oder über Vermittlung 682-0

Fax: (0228) 682-4420 Tlx.: 886645

Tlx.: 2283735 = BMF

Oberste Bundesbehörden



Ca. 10. Mrz 91
13. Juli 2/10
23/3

Betr.: Gewährung von Leistungen des Bundes an Stellen in der DDR;
hier: Vergabeverfahren

Bezug: Mein Schreiben vom 27. Februar 1990
- II A 3 - H 1362/1 - 6/90 -

Anlg.: - 1 -

Ich übersende einen Abdruck der am 9. März 1990 abgeschlossenen Vereinbarung über das Verfahren der Gewährung von Leist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 Stell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it der Bitte um entsprechende Beachtung.

Die in meinem o.a. Schreiben vom 27. Februar 1990 genannten haushaltsrechtlichen Grundsätze gelten fort.

In dem zwischen der bewilligenden Behörde und der Stelle in der DDR zu schließenden privatrechtlichen Vertrag ist für Aufträge zu bestimmen, daß sie nur im Wettbewerb vergeben werden und bei Aufträgen in die Bundesrepublik - soweit möglich - mindestens 3 Angebote einzuholen sind. Das Prüfungsrecht der bewilligenden Behörd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ie das Prüfungsrecht des BRH sind in dem Vertrag bis zum Letztempfänger sicherzustellen (s. hierzu Artikel 1 Abs. 2 Anstrich 5 der Vereinbarung).

Die Auszahlung von Mitteln wird durch Kassenanordnungen der bewilligenden Behörde (anordnende Stelle) an die zuständige Bundeskasse bewirkt. In der Kassenanordnung ist entweder ein DM-Konto bei einem Geldinstitut der DDR (Staatsbank der DDR, Genossenschaftsbanken o.a.) oder ein Freikonto des Zahlungsempfängers bei einem Geldinstitu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zugeben.

Mein Rundschreiben vom 23. Januar 1990 - II A 2 - H 1200 - 5/90 - zur Haushaltsführung 1990 bleibt unberührt.

Im Auftrag


Dr. Overhaus

VEREINBARUN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as Verfahren der Gewährung von Leist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 Stell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treten durch den Bundesminister der Finanzen,

un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vertreten durch den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schließen folgende Vereinbarung:

Artikel 1

Verfahren der Leistungsgewährung

(1) Sowei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Leistungen zur Erfüllung bestimmter Zwecke an Stell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währt, wird das Verfahren durch privatrechtlichen Vertrag geregelt. Die Leistungen können Geld- oder Sachleistungen sein.

(2) In dem privatrechtlichen Vertrag ist insbesondere zu regeln:

- Art und Umfang der Leistung,
- der Zweck der Leistung und die Dauer der Zweckbindung von hingeebenen oder aus der Leistung beschafften Gegenständen,

an LIA 3

- der Verwendungszeitraum,
- die Abwicklung der Maßnahme (u.a. Anforderung und Auszahlung/ Lieferung der Leistung, Mitteilungspflichten des Leistungsempfängers, Nachweis der Verwendung der Leistung und - soweit in Betracht kommend - Vergabe von Aufträgen, Inanspruchnahme von Schutzrechten und Sicherung dinglicher Rechte),
- die Prüfung der Verwendung der Leistung,
- die Anerkennung der Gründe für eine Kündigung des Vertrages aus wichtigem Grund, der Rückzahlungsverpflichtungen und der Verzinsung des Rückzahlungsbetrages.

(3) Soweit Stel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Weiterleitung der Leistung eingeschaltet werden, gilt Absatz 2 für die Weiterleitung entsprechend.

Artikel 2

Verwaltungsmäßige Prüfung

Der Behörd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d mit dieser Vereinbarung das Recht zur örtlichen Prüfung der Weiterleitung und der Verwendung der Leistung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geräumt.

Artikel 3

Prüfung durch den Bundesrechnungshof

Dem Bundesrechnungshof wird mit dieser Vereinbarung das Recht zur örtlichen Prüfung der Weiterleitung und der Verwendung der Leistung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geräumt. Das Verfahren der Prüfung wird durch besondere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rechnungshof und der Staatlichen Finanzrevisi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regelt.

Artikel 4

Entsprechend dem Viermächte-Abkommen vom 3. September 1971 wird dieses Abkommen in Übereinstimmung mit den festgelegten Verfahren auf Berlin (West) ausgedehnt.

Artikel 5

Inkrafttreten

Diese Vereinbarung tritt mit Wirkung vom 12. März 1990 in Kraft.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Vertretung



Bonn, den 09. März 1990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onn, den 09. März 1990

문서 번호 24

동독 저축금고 및 지로협회 규정

1990 년 3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Präsident der Staatsbank der DDR Horst Kaminsky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중앙은행장 호스트 카민스키가 동독의 저축금고협회의 회칙을 승인하기 위해 내린 지침이다. 이 지침의 부록에서는 저축금고협회의 회칙이 포함되어 있다. 회칙은 저축금고협회의 법적 지위와 협회의 소재지, 업무와 권한, 조직, 이사회, 총회와 자문위원회, 협회 지도부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NN, S. 233-236, Ausgabetag 25.04.1990

(4) Über die Beschwerde ist innerhalb von 14 Tagen nach ihrem Eingang zu entscheiden. Wird der Beschwerde nicht oder nicht in vollem Umfang stattgegeben, ist sie innerhalb dieser Frist dem übergeordneten Rat zur Entscheidung zuzuleiten. Der Einreicher der Beschwerde ist davon zu informieren. Der übergeordnete Rat entscheidet innerhalb weiterer 14 Tage.

(5) Kann in Ausnahmefällen eine Entscheidung innerhalb der Frist nicht getroffen werden, ist rechtzeitig ein Zwischenbescheid unter Angabe der Gründe sowie des voraussichtlichen Abschlußtermins zu geben.

(6) Gegen den Festsetzungsbescheid kann der Bürger, nachdem über seine Beschwerde auf dem Verwaltungsweg entschieden worden ist, Antrag auf Nachprüfung durch das Gericht stellen. Das Gericht kann in der Sache selbst entscheiden.

(7) Für das Verfahren gelten die Bestimmungen des Gesetzes über die Zuständigkeit und das Verfahren der Gerichte zur Nachprüfung von Verwaltungsentscheidungen.¹

§ 5

Mitarbeiter von Staatsorganen sowie Bürger, die sich in einem Dienstverhältnis befinden, können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Kommunalwahlen abgeordnet werden.

§ 6

(1) Kommissionshändler, selbständige Handwerker, Gewerbetreibende und andere selbständig bzw. freiberuflich Tätige, die in Wahlkommissionen, Wahlvorständen oder Wahlbüros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Kommunalwahlen mitarbeiten, erhalten auf Antrag für den ihnen durch die Wahrnehmung dieser Aufgaben entstehenden Verdienstaufschlag eine Entschädigung vom örtlich zuständigen Rat. Die Entschädigungen werden wie Einkünfte aus der jeweiligen Erwerbstätigkeit besteuert und unterliegen der Beitragspflicht zur Sozialversicherung. Die Entschädigung für Verdienstaufschlag beträgt bis zu 10 M je Stunde, im Höchstfall 80 M täglich. Ist es den Bürgern nicht möglich, einen Nachweis über ihren Verdienstaufschlag zu erbringen, entscheidet der örtlich zuständige Rat im Rahmen der vorgenannten Höchstbegrenzung über die Höhe der zu zahlenden Entschädigung.

(2) Der Antrag auf Entschädigung ist bis spätestens 14 Tage nach Beendigung der Mitarbeit beim örtlich zuständigen Rat zu stellen. Für das Verfahren und die Entscheidung gilt § 4 entsprechend.

§ 7

Mit Bürgern, die nicht berufstätig sind, kann in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Kommunalwahlen der örtlich zuständige Rat ein zeitlich befristetes Arbeitsverhältnis abschließen.

§ 8

Reisekoste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Kommunalwahlen entstehen, sind dem Bürger entsprechend den Rechtsvorschriften vom örtlich zuständigen Rat im Rahmen der Vorfinanzierung zu erstatten.

§ 9

(1) Die sachliche und örtliche Zuständigkeit des Rates nach dieser Anordnung bestimmt sich nach der territorialen Zuordnung der jeweiligen Wahlkommission, des Wahlvorstandes bzw. Wahlbüros, bei dem die Mitarbeit durch den Bürger erfolgt.

(2) Entscheidungen nach § 4 Abs. 2 und § 6 Abs. 1 trifft im Auftrag des Rates das fachlich zuständige Ratsmitglied bzw. in Gemeinden der Bürgermeister. Die Beschwerdeentscheidungen werden durch das übergeordnete fachlich zuständige Ratsmitglied bzw. den Vorsitzenden des Rates des Kreises getroffen.

¹ Z. Z. gilt das Gesetz vom 14. Dezember 1988 über die Zuständigkeit und das Verfahren der Gerichte zur Nachprüfung von Verwaltungsentscheidungen (GBl. I Nr. 28 S. 327).

§ 10

Die Anordnung tritt mit Wirkung vom 9. März 1990 in Kraft.

Berlin, den 20. April 1990

**Der 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es**
Dr. Hildebrandt

Anordnung über die Satzung des Sparkassenverbandes der DDR vom 20. März 1990

§ 1

Die Satzung des Sparkassenverbandes der DDR, die am 20. März 1990 durch den Verbandstag beschlossen wurde (Anlage), wird hiermit bestätigt.

§ 2

Diese Anordnung tritt am 20. März 1990 in Kraft.

Berlin, den 20. März 1990

**Der Präsident der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aminsky

Anlage

zu vorstehender Anordnung

Satzung des Sparkassenverbandes der DDR

I.

Rechtliche Stellung und Sitz

§ 1

(1) Der Sparkassenverba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nachfolgenden Verband genannt) ist 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mit Sitz in Berlin, der Hauptstadt der DDR.

(2) Der Verband ist ein Zusammenschluß der Sparkassen der DDR, die entsprechend dem Statut der Sparkassen Einrichtungen der Räte der Stadtkreise bzw. Landkreise sowie des Magistrats von Berlin sind (im nachfolgenden Sparkassen genannt).

II.

Aufgaben und Befugnisse des Verbandes

§ 2

(1) Der Verband ist der Interessenvertreter der Sparkassen in ihrer Gesamtheit. Der Verband löst seine Aufgaben auf der Grundlage der Beschlüsse des Verbandstages und stützt sich in seiner Tätigkeit auf die Arbeit von Ausschüssen.

(2) Der Verband unterbreitet Vorschläge für einheitliche rechtliche Regelungen, die die Sparkassenarbeit betreffen.

(3) Der Verband fördert die Arbeit der Sparkassen durch Beratung, Information, Unterstützung sowie Organisierung von Betriebsvergleichen und Erfahrungsaustauschen.

(4) Der Verband ist berechtigt, verbindliche Regelungen zu treffen, soweit diese für die Lösung der Aufgaben einheitlich notwendig sind.

(5) Der Verband ist berechtigt, Gemeinschaftsunternehmen, die der Förderung der Sparkassen dienen, zu gründen bzw. sich an Gemeinschaftsunternehmen zu beteiligen.

(6) Besteht ein gemeinschaftliches Interesse der Sparkassen, ist der Verband berechtigt, Verträge und Vereinbarungen abzuschließen, aus denen die einzelnen Sparkassen unmittelbar berechtigt und verpflichtet werden.

(7) Dem Verband obliegt die Förderung der Aus- und Weiterbildung der Mitarbeiter der Sparkassen.

(8) Dem Verband obliegt gemäß § 11 die Prüfung der Mitgliedsparkassen.

(9) Der Verband ist Tarifpartner für seine Mitgliedsparkassen gegenüber der zuständigen Gewerkschaft.

(10) Der Verband entwickelt einheitliche Werbestrategien.

(11) Der Verband ist berechtigt, zur Durchführung seiner Aufgaben Einrichtungen gemäß § 9 zu unterhalten.

III.

Organisation

§ 3

Verbandsorgane

(1) Die Organe des Verbandes auf Republiksebene sind

- a) der Verbandstag
- b) der Verbandsrat.

(2) Die Organe des Verbandes auf Bezirksebene sind

- a) die Mitgliederversammlung
- b) der Beirat.

§ 4

Der Verbandstag

(1) Der Verbandstag ist das höchste Organ des Verbandes. Er setzt sich zusammen aus

- a) den Direktoren der Mitgliedsparkassen
- b) den Mitgliedern des Verbandsrates
- c) den Direktoren der Bezirksgeschäftsstellen,

die je Person mit einer Stimme stimmberechtigt sind.

(2) Der Verbandstag wird vom Präsidenten des Verbandes einberufen und geleitet. Der Verbandstag tritt mindestens jährlich zusammen. Eine Einberufung erfolgt außerdem auf

- a) Beschluß des Verbandsrates
- b) Antrag von mindestens einem Viertel der Direktoren der Mitgliedsparkassen.

(3) Der Verbandstag wählt auf Vorschlag der Mitglieder des Verbandstages in geheimer Wahl

- den Präsidenten für die Dauer von 6 Jahren
- die beiden Stellvertreter des Präsidenten für die Dauer von 4 Jahren

jeweils maximal bis zur Vollendung ihres 65. Lebensjahres. Die Wiederwahl ist möglich. Der Verbandstag hat das Recht, den Präsidenten sowie seine Stellvertreter abzuwählen.

(4) Der Verbandstag wählt die Mitglieder des Verbandsrates gemäß § 5 (1) auf Vorschlag der Mitgliederversammlungen für die Dauer von 4 Jahren. Die Wiederwahl ist möglich.

(5) Der Verbandstag ist beschlußfähig, wenn mehr als 3/4 der Mitgliedsparkassen vertreten sind. Ist die Beschlußfähigkeit nicht gegeben, wird der Verbandstag innerhalb von

sechs Wochen erneut einberufen. Er ist dann in jedem Fall beschlußfähig. Die Beschlußfassung erfolgt mit einfacher Stimmenmehrheit, bei Stimmgleichheit entscheidet die Stimme des Präsidenten des Verbandes.

(6) Der Verbandstag faßt Beschlüsse über die Abwahl des Präsidenten sowie seiner Stellvertreter und die Auflösung des Verbandes mit einer Mehrheit von 3/4 der Stimmen der anwesenden Stimmberechtigten.

(7) Der Verbandstag berät und beschließt über die Grundfragen der Sparkassenarbeit. Er beschließt über alle Angelegenheiten, die ihm vom Verbandsrat vorgelegt werden oder deren Erörterung von einem Drittel der Mitglieder des Verbandstages beantragt wird. Er beschließt weiterhin über die Annahme,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Satzung des Verbandes.

(8) Der Verbandstag nimmt die Rechenschaftslegung des Verbandsrates und des Präsidenten des Verbandes entgegen. Der Verbandstag erteilt dem Verbandsrat und dem Präsidenten Entlastung. Der Verbandstag beschließt den Finanzplan auf Vorschlag des Verbandsrates.

§ 5

Der Verbandsrat

(1) Mitglieder des Verbandsrates sind

- a) je Bezirk ein Vertreter der für die Sparkassen verantwortlichen Räte einschließlich des Magistrats von Berlin
- b) ein Vertreter des Städte- und Gemeindetages der DDR
- c) je Bezirk ein Sparkassendirektor sowie der Direktor der Sparkasse der Stadt Berlin
- d) der Präsident des Verbandes
- e) die beiden Stellvertreter des Präsidenten
- f) ein Direktor einer Bezirksgeschäftsstelle
- g) ein Vertreter der Hauptgeschäftsstelle, der von der Belegschaft gewählt wird.

Die unter e) bis g) genannten Mitglieder nehmen an den Beratungen des Verbandsrates mit beratender Stimme teil. Die stimmberechtigten Mitglieder des Verbandsrates wählen einen Vorsitzenden.

(2) Die Tagungen des Verbandsrates finden auf Einladung des Vorsitzenden des Verbandsrates statt, mindestens zweimal jährlich. Außerdem sind Tagungen anzuberaumen, wenn das von mindestens einem Viertel der Mitglieder des Verbandsrates gefordert wird.

(3) Der Verbandsrat ist beschlußfähig, wenn mehr als die Hälfte der Mitglieder vertreten ist. Ist die Beschlußfähigkeit nicht gegeben, wird der Verbandsrat innerhalb von vier Wochen erneut einberufen. Er ist dann in jedem Fall beschlußfähig. Die Beschlußfassung erfolgt mit einfacher Stimmenmehrheit. Bei Stimmgleichheit entscheidet die Stimme des Vorsitzenden.

(4) Der Verbandsrat arbeitet auf der Grundlage der Beschlüsse des Verbandstages und vertritt den Verbandstag zwischen seinen Tagungen.

(5) Der Verbandsrat kann zur Lösung spezieller Aufgaben Ausschüsse bilden und deren Mitglieder berufen.

(6) Der Verbandsrat beschließt über

- die Gründung von bzw. die Beteiligung an Gemeinschaftsunternehmen gemäß § 2 (5)
- einheitliche Grundsätze für verbindliche Regelungen gemäß § 2 (4)
- einheitliche Werbestrategien
- die Geschäftsordnung und den Stellenplan der Geschäftsstelle
- die Berufung und Abberufung des Leiters der Prüfungsstelle.

§ 6

Die Mitgliederversammlungen

(1) Die Mitgliederversammlungen setzen sich zusammen aus

- a) je einem Vertreter der Räte, die für die Sparkassen verantwortlich sind,
- b) den Direktoren der Sparkassen des Bezirkes,
- c) dem Direktor der Bezirksgeschäftsstelle des Verbandes, die mit je einer Stimme stimmberechtigt sind.

(2) Die Mitgliederversammlung tagt mindestens jährlich, jedoch jeweils vor dem Verbandstag. Die Mitgliederversammlung wird vom Direktor der Bezirksgeschäftsstelle einberufen, der den Vorsitz führt. Die Einberufung erfolgt außerdem auf

- a) Beschluß des Beirates
- b) Antrag von mindestens einem Viertel aller Mitglieder.

(3) Die Mitgliederversammlung ist beschlußfähig, wenn mehr als die Hälfte der Mitglieder vertreten ist. Ist die Beschlußfähigkeit nicht gegeben, wird die Mitgliederversammlung innerhalb von sechs Wochen erneut einberufen. Sie ist dann in jedem Fall beschlußfähig. Die Beschlussfassung erfolgt mit einfacher Stimmenmehrheit. Bei Stimmengleichheit entscheidet die Stimme des Vorsitzenden des Beirates.

(4) Die Mitgliederversammlung schlägt dem Verbandstag die Kandidaten des Bezirkes für die Wahl zum Verbandsrat vor. Die Mitgliederversammlung kann dem Präsidenten den einzusetzenden Direktor der Bezirksgeschäftsstelle vorschlagen bzw. seine Ablösung fordern.

(5) Die Mitgliederversammlung wählt die Mitglieder des Beirates für die Dauer von 4 Jahren. Die Wiederwahl ist möglich. Die Mitgliederversammlung bestimmt die Anzahl der Mitglieder des Beirates.

(6) In der Mitgliederversammlung werden Fragen behandelt und Beschlüsse gefaßt, die vom Beirat oder den Mitgliedern eingebracht werden. Die Mitgliederversammlung entlastet den Beirat.

§ 7

Der Beirat

(1) Mitglieder des Beirates sind

- a) Vertreter der Räte und Sparkassendirektoren zu gleichen Anteilen
- b) der Direktor der Bezirksgeschäftsstelle
- c) ein Vertreter der Bezirksgeschäftsstelle, der von der Belegschaft gewählt wird, nimmt mit beratender Stimme teil.

Die Mitglieder des Beirates wählen aus den unter a) und b) genannten Mitgliedern einen Vorsitzenden.

(2) Die Tagungen des Beirates finden auf Einladung des Vorsitzenden statt, mindestens zweimal jährlich. Außerdem sind Tagungen anzuberaumen, wenn das von mindestens einem Viertel der Mitglieder des Beirates gefordert wird.

(3) Der Beirat ist beschlußfähig, wenn mehr als die Hälfte der Mitglieder vertreten ist. Ist die Beschlußfähigkeit nicht gegeben, wird der Beirat innerhalb von vier Wochen erneut einberufen. Er ist dann in jedem Fall beschlußfähig. Die Beschlussfassung erfolgt mit einfacher Stimmenmehrheit. Bei Stimmengleichheit entscheidet die Stimme des Vorsitzenden.

(4) Der Beirat berät den Direktor der Bezirksgeschäftsstelle zu den bezirksspezifischen Angelegenheiten der Sparkassenarbeit und bestimmt über die in den Mitgliederversammlungen zu behandelnden und beschließenden Fragen.

(5) Der Beirat ist der Mitgliederversammlung rechenschaftspflichtig.

IV.

Leitung und Vertretung des Verbandes

§ 8

(1) Der Verband wird im Rechtsverkehr durch den Präsidenten und im Falle seiner Verhinderung durch einen der beiden Stellvertreter vertreten.

(2) Der Präsident ist gegenüber den Direktoren der Bezirksgeschäftsstellen weisungsberechtigt.

(3) Der Präsident führt ein Dienstsiegel.

(4) Der Präsident legt die Vertretungsbefugnisse für die Mitarbeiter des Verbandes fest.

(5) Der Präsident ist berechtigt, im Interesse der effektiven Lösung von Aufgaben, kurzfristig Ausschüsse einzusetzen und deren Mitglieder zu berufen.

(6) Der Direktor der Bezirksgeschäftsstelle ist dem Präsidenten für die Erfüllung der ihm obliegenden Aufgaben verantwortlich. Der Direktor der Bezirksgeschäftsstelle ist dem Beirat und der Mitgliederversammlung gegenüber rechenschaftspflichtig.

V.

Einrichtungen des Verbandes

§ 9

(1) Zur Erfüllung der Aufgaben des Verbandes ist

- a) eine Geschäftsstelle
- b) eine Prüfungsstelle

einzurichten.

(2) Der Verbandstag kann die Bildung weiterer Einrichtungen beschließen.

§ 10

Geschäftsstelle

(1) Die Geschäftsstelle des Verbandes hat die laufenden Aufgaben des Verbandes wahrzunehmen. Sie wird vom Präsidenten geleitet. Der Präsident regelt die Geschäftsverteilung auf der Grundlage der vom Verbandsrat beschlossenen Geschäftsordnung.

(2) Die Geschäftsstelle gliedert sich in

- a) eine Hauptgeschäftsstelle
- b) Bezirksgeschäftsstellen.

§ 11

Prüfungsstelle

(1) Der Verband übt die Prüfung der Mitgliedsparkassen auf der Grundlage einer Prüfungsordnung über eine Prüfungsstelle aus. Die Prüfungsstelle ist bei der Durchführung von Prüfungen unabhängig und nicht an Weisungen der Verbandsorgane gebunden, die den Umfang, die Art und Weise oder das Ergebnis der Prüfung betreffen.

(2) Der Prüfungsstelle obliegt die Jahresabschlußprüfung und die Durchführung thematischer Prüfungen der Mitgliedsparkassen. Auf Antrag der Mitgliedsparkassen sowie der zuständigen örtlichen Räte können weitere Prüfungen vorgenommen werden.

(3) Die Revisionsergebnisse sind vor Vertretern des zuständigen örtlichen Rates sowie der Leitung der geprüften Sparkasse auszuwerten.

(4) Für die Jahresabschlußprüfungen und die Prüfungen auf Antrag werden Gebühren erhoben. Der Verbandsrat regelt die Gebühren.

VI.

Revision des Verbandes

§ 12

- (1) Die Prüfung des Verbandes obliegt einem unabhängigen Prüfungsorgan.
- (2) Die Prüfungsergebnisse sind dem Verbandsrat zur Kenntnis zu geben.

VII.

Finanzen

§ 13

- (1) Der Verband arbeitet auf der Grundlage eines Finanzplanes.
- (2) Zur Deckung des Finanzbedarfs des Verbandes werden von den Sparkassen Umlagen erhoben. Die Höhe der Umlagen

zur Deckung der laufenden Geschäftskosten wird im Finanzplan festgelegt.

(3) Der Verband ist berechtigt, Vermögen und Fonds zu bilden, die der Förderung des Sparkassenwesens dienen. Die Finanzierung erfolgt durch Beteiligungen der Sparkassen. Die Höhe der Beteiligungen wird vom Verbandsrat beschlossen. Der Verband haftet mit seinem Vermögen für die Verpflichtungen des Verbandes. Darüber hinaus haften die Mitgliedssparkassen. Der Verband bildet zentrale Reservefonds zum zeitweiligen Ausgleich von Verlusten der Sparkassen und des Verbandes. Zuführungen zu diesen Fonds werden von allen Sparkassen erhoben bzw. vom Verband geleistet.

(4) Die Grundsätze für die Bildung und Verwendung von Vermögen und Fonds sind in einer Finanzordnung zu regeln. Diese ist durch den Verbandsrat zu beschließen, zu ändern oder aufzuheben.

(5) Über die Bezugsbasis von Umlagen und Beteiligungen beschließt der Verbandstag.

(6) Der Verband stellt jährlich eine Bilanz sowie eine Ergebnisrechnung auf.

Neuerscheinung!

Ausgewählte Rechtsvorschriften zum Steuerrecht

Auf Grund vieler Nachfragen von Bürgern sowie der 6. DB zur VO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DDR — Steuern und Abgaben —, deren Anlage die z. Z.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für die Besteuerung dieser Unternehmen festlegt, veröffentlicht im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23/90, wurde kurzfristig dieser Titel herausgegeben. Er beinhaltet eine Zusammenfassung der Sonderdrucke des Gesetzblattes:

- Sonderdruck Nr. 670 — Einkommensteuergesetz
- Sonderdruck Nr. 671 — Körperschaftsteuergesetz
- Sonderdruck Nr. 672 — Gewerbesteuergesetz
- Sonderdruck Nr. 673 — Umsatzsteuergesetz
- Sonderdruck Nr. 674 — Bewertungsgesetz
- Sonderdruck Nr. 675 — Vermögensteuergesetz
- Sonderdruck Nr. 676 — Grundsteuergesetz
- Sonderdruck Nr. 677 — Grunderwerbsteuergesetz
- Sonderdruck Nr. 678 — Erbschaftsteuergesetz
- Sonderdruck Nr. 679 — Beförderungsteuergesetz
- Sonderdruck Nr. 681 — Abgabenordnung
- Sonderdruck Nr. 1016 — Besteuerungs-RL

Der Titel ist ab sofort zum EVP von 9,80 M beim Staatsverlag der DDR,

Bereich Amtliche Dokumente, Otto-Grotewohl-Straße 17, Berlin, 1086,

schriftlich zu bestellen oder werktags in der Zeit von 10.00 bis 18.00 Uhr käuflich zu erwerben.

Darüber hinaus besteht auch Kaufmöglichkeit bei Selbstabholung und gegen Barzahlung in der

Buchhandlung für Amtliche Dokumente

Neustädtische Kirchstraße 15, Berlin, 1080.



STAATSVRLA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ausgeber: Sekretariat des Minister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losterstraße 47, Berlin, 1020 — Redaktion: Klosterstraße 47, Berlin, 1020, Telefon: 233 36 22 — Veröffentlicht unter Lizenz-Nr. 751 — Verlag: (610/62) Staatsverla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tto-Grotewohl-Str. 17, Berlin, 1086, Telefon: 233 45 01 — Erscheint nach Bedarf — Fortlaufender Bezug nur durch die Post — Bezugspreis: monatlich Teil I —,80 M, Teil II 1,— M — Einzelabgabe bis zum Umfang von 8 Seiten —,15 M, bis zum Umfang von 16 Seiten —,25 M, bis zum Umfang von 32 Seiten —,40 M, bis zum Umfang von 48 Seiten —,55 M je Exemplar, je weitere 16 Seiten —,15 M mehr.

Einzelbestellungen beim Zentral-Versand Erfurt, Postschließfach 696, Erfurt, 5010. Außerdem besteht Kaufmöglichkeit nur bei Selbstabholung gegen Barzahlung (kein Versand) in der Buchhandlung für amtliche Dokumente, Neustädtische Kirchstraße 15, Berlin, 1080, Telefon: 229 22 23.

Artikel-Nr. (EDV) 505 003

Gesamtherstellung: Staatsdruckerei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ollenoffsetdruck)

ISSN 0138-1644

문서 번호 25

동독에 시장경제적 기본틀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경제부장관의
시각

1990 년 3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경제부 장관, 수상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 경제부 장관 하우스만이 헬무트 콜 수상에게 보낸 것으로 사회적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동독에 도입되고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수 있기 위해서 동독에 도입되어야 할 기본틀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독의 사법과 행정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지침으로는 다른 여러 사항 중에서도 생산, 물자제공, 투자 그리고 인력투입 등과 같은 기업가적 결정과 가격문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계획지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동독 경제의 구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를 위해 환경침해가 발생해서는 않된다.
2. 경제화폐공동체가 출범할 때까지 개정되어야만 하는 동독의 법률: 개인소유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대지에 대한 법조항의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동법, 기업법, 공동결정권 그리고 노동쟁의권이 서독 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맞추어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늦어도 경제화폐공동체가 설립될 때에는 효력을 발휘해야 할 새로운 법: 가능한 한 인민소유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전환, 민간상업은행과 보험의 허용, 타지역의 점포 허용, 가격규제의 해제와 가격감시제의 도입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Gesch.-Z.: L D 3 (n.i.E.)

Kopie

An den
Bundeskanzl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rn Dr. Helmut Kohl
Adenauerallee 139/141

Kopie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Zitierweise: Archiv Bundesstiftung Aufarbeitung,
Markus Meckel, Akte

631

5300 Bonn 1

Sehr geehrter Herr Bundeskanzler!

Beigefügt übersende ich, wie gestern im Kabinett besprochen, Überlegungen meines Hauses zu den Mindestanforderungen marktwirtschaftlicher Rahmenbedingungen in der DDR für den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eine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zu Ihrer persönlichen Verwendung.

Die Umstellung der Rechtsordnung der DDR auf die Soziale Marktwirtschaft erfordert eine Fülle von Änderungen alter und erst in den letzten Wochen erlassener Gesetze. Es besteht die Gefahr, daß eine Anpassung der Rechtslage selbst bei den dringendsten zur Regelung anstehenden Bereichen schon aus technischen Gründen nicht erfolgen k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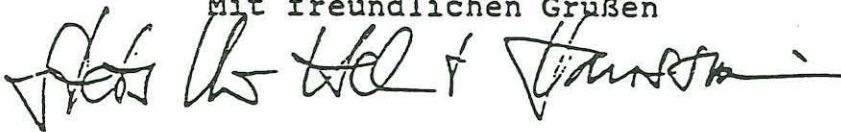
Deshalb soll ein wenige Grundsätze enthaltendes Leitsätze-gesetz als eine erste Interpretationshilfe und -anweisung für Verwaltung und Justiz die sofortige Anwendung marktwirtschaftlicher Grundsätze sichern. Elemente für ein

solches Gesetz aus der Sicht meines Hauses sind als Anlage beigefügt. Außerdem müßten die anderen Ressorts Regelungsvorschläge liefern. Dies gilt unter anderem für den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vor allem für das Arbeits- und Betriebsverfassungsrecht und für den Bundesminister der Finanzen für das Steuerrecht.

Gleichzeitig müßte die DDR ihr umfangreiches Wirtschaftsrecht im einzelnen anpassen. Eine Zusammenstellung der aus Sicht der Wirtschaft dringendsten Änderungen enthält Anlage 2. Schließlich ist auch der Erlass von neuen Gesetzen erforderlich (Anlage 3).

Die ganze Materie und die Abwägung der Prioritäten sowie die Möglichkeiten der DDR müssen noch eingehend diskutiert werden. Die genannten Vorschläge sind mit den Ressorts noch abzustimmen.

Mit freundlichen Grüßen



Elemente eines Leitsatzgesetzes

1. Bei allen Entscheidungen ist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der Wirtschaftlichkeit und Sparsamkeit bei Verwendung öffentlicher Mittel und unter Berücksichtigung von Erfordernissen des Umweltschutzes dem Ziel einer Steigerung der Effizienz in der Wirtschaft Vorrang einzuräumen.
2. Private Unternehmen dürfen nicht schlechter behandelt werden als staatliche.
3. Unternehmerische Entscheidungen sind frei von Planvorgaben (z.B. im Hinblick auf Produktion, Bezüge, Lieferungen, Investitionen und Personaleinsatz).
4. Freiheit des Erwerbs von und Verfügung über Grund und Boden und sonstige Produktionsmittel sind für gewerbliche Tätigkeit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Aus diesem Grunde ist von der Ermächtigung in Art. 12 Abs. 1 S. 2 der Verfassung der DDR extensiv Gebrauch zu machen (Ausnahme ist Unveräußerbarkeit von Volkseigentum).
5. Es herrscht Vertragsfreiheit. Generalklauseln wie z.B. "sozialistische Moral", "sozialistische Anschauungen", "politische Macht der Arbeiterklasse" sow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in bestehenden Rechtsvorschriften sind nicht mehr anzuwenden.
6. Die Preisbildung ist frei, sofern nicht aus zwingenden gesamtwirtschaftlichen Gründen Preise staatlich festgesetzt sind.

7. Es gilt der Grundsatz des freien Außenwirtschaftsverkehrs.
8. Alle Unternehmen haben ohne Diskriminierung Zugang zu Devisen.
9. Alle staatlichen Entscheidungen haben den Grundsatz der Rechtssicherheit zu berücksichtigen.
10. Wird jemand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in seinen Rechten verletzt, so steht ihm der Rechtsweg offen. Soweit eine andere Zuständigkeit nicht begründet ist,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Gesetze der DDR, die bis zum Inkrafttreten eine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geändert werden müssen

- Anpassung von Vorschriften über Grund und Boden mit dem Ziel privaten Eigentumserwerbs und der Nutzung als Kredit-sicherungsmittel (insbesondere § 17 Abs. 2 Joint-Venture-Verordnung, § 4 des Gesetzes über private Unternehmen, § 20 Zivilgesetzbuch)
- Streichung der die freie Preisbildung ausschließenden Vorschriften (vor allem § 21 Abs. 1 Joint Venture-Verordnung, § 10 des Gesetzes über private Unternehmen), flankiert von einem Gesetz über Preisüberwachung (vgl. Anlage 3)
- Anpassung des Arbeits-, Betriebsverfassungs-, Mitbestimmungs- und Arbeitskampfrechts an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n Grundsätze. Das heißt insbesondere:
 - . Aufhebung bzw. Änderung von Vorschriften des Gewerkschaftsgesetzes:
 - .. Initiativ-/Mitwirkungsrechte bei Gesetzen (§ 10)
 - .. Mitbestimmung bei allen betrieblichen Entscheidungen (§§ 11 ff.)
 - .. Recht, alle betrieblichen Entscheidungen zu suspendieren (§ 16)
 - .. Verbot der Aussperrung (§ 18, Verfassungsänderung erforderlich!)
 - .. Begrenzung des "Montan-Modells" (Neutraler gibt Ausschlag, Anteilseigner in Minderheit) nur auf Aufsichtsräte solcher Kapitalgesellschaften, deren

Aufsichtsräte auch in der Bundesrepublik nach dem Montan-Modell besetzt werden (Anpassung § 8 der Verordnung über die Umwandlung von Kombinat^{en} u.ä. in GmbH und Aktiengesellschaften)

- Im Handels- und Zivilrecht Abschaffung des Vertragsgesetzes (darin Planwirtschaft!)
- Freier Außenwirtschaftsverkehr (Verfassungsänderung erforderlich!) unter Berücksichtigung notwendiger Kontrollen (insbesondere COCOM, gefährliche Chemikalien).
 - . Aufhebung des Gesetzes über den Außenhandel (Beseitigung des Außenhandelsmonopols)
 - . Anpassung des Devisengesetzes mit Ziel freien Kapital- und Zahlungsverkehrs
- Steueränderungsgesetz: Weitere Senkung der Steuerbelastung
- Grundlegende Verbesserung der Joint Venture-Verordnung (Beseitigung der 49 %-Regel, des Devisentransferverbots, Einführung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besser wäre aber "sauberes" Niederlassungsgesetz, siehe Anlage 3.

Kopie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Zitierweise: Archiv Bundesstiftung Aufarbeitung,
Markus Meckel, Akte

Kopie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Zitierweise: Archiv Bundesstiftung Aufarbeitung,
Markus Meckel, Akte

Neue Gesetze, die spätestens mit Schaffung de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in Kraft treten müssen

- Ausführungsgesetz zu Art. 12 Abs. 1 Satz 2 der Verfassung: soweit wie möglich Umwandlung des bisherigen Volkseigentums in privates Eigentum
- Klarer Privatisierungsauftrag für "sozialistische" Aktiengesellschaften und GmbH durch Ausführungsgesetz zu § 10 Umwandlungsverordnung
- Zulassung freier Niederlassungen für Gebietsfremde
- Zulassung privater Geschäftsbanken und Versicherungen
- 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 Übernahme des GWB (in Vorbereitung mit Sonderregelung für Fusionskontrolle in Übergangszeit)
- Regeln für öffentliche Aufträge
- Liberale Regelungen für freie Berufe
- Wirtschaftsprüfungswesen
- Statistik für Arbeitsmarkt, Preise, Produktion, Außenhandel und Einzelhandel
- Harmonisierung des Steuerrechts (u.a. Umsatzsteuer!)

문서 번호 26

콜 총리에게 보내는 블림 장관의 서한 - 화폐 교환 비율의 사회적 의미

1990 년 3 월 27 일

담당자 / 기관: 연방 노동복지부 장관 노베르트 블림(Nobert Blüm), 헬무트 콜 연방 총리

내용:

- 동독은 그곳에서도 시장 경제의 사회적 요소가 뿌리를 내린 뒤에야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독 정부에 대한 신뢰에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 2:1 화폐 교환 비율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사회 보조금 제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서독과 서베를린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화폐 교환 비율은 서독 연방주들에서도 관철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231, S. 979-980.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Blüm an Bundeskanzler Kohl Soziale Implikationen des Umtauschkurses

Bonn, 27. März 1990

BK, 422 – 35006 De 13 NA 4. – Mit Stempel: Vorzimmer Bundeskanzler, 27. März 1990. Hs. von Bundeskanzler Kohl vermerkt: »R[udolf] Seiters + B[aldur] Wagner sofort prüfen u. R[ücksprache]«.

Sehr geehrter Herr Bundeskanzler,

Deutschland ist auf dem Weg zur Einheit – politisch, wirtschaftlich und sozial. Dieser Weg wird bei unseren Mitbürgern in der DDR aber nur dann Akzeptanz finden, wenn die sozialen Elemente des marktwirtschaftlichen Systems auch dort entsprechend ausgeprägt sind. Vor diesem Hintergrund möchte ich im Anschluß an unser Gespräch vom Donnerstagabend, dem 21. 3. 1990, Ihnen nach näherer Prüfung der diskutierten Zahlen meine Einschätzung zur Frage des Umstellungssatzes darlegen. Ich bin der Überzeugung, daß ein Umstellungssatz, der unter der Relation 1:1 liegt, zu tiefgreifenden sozialen Verwerfungen sowie zu destabilisierenden politischen Folgewirkungen führen würde.

Zunächst möchte ich allerdings klarstellen, daß entgegen dem in unserem Gespräch von dritter Seite erweckten Eindruck die Zahlen des besprochenen Lohnmodells nicht mit dem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abgestimmt waren. Ich halte das vorgetragene Lohnmodell auch für sachlich nicht überzeugend.

Meine Einschätzung zu einem Umstellungssatz von 2:1 ist:

– Die Menschen in der DDR müßten krasse Einbußen gegenüber ihrem bisherigen, ohnehin niedrigeren Lebensstandard hinnehmen; dies gilt insbesondere für Rentner, Familien und Arbeitslose. Millionen Menschen würden unter die Sozialhilfeschwelle geraten. Die durchschnittliche Rente liegt in der DDR bei subventionierten Preisen bei 450 DM – und es gibt knapp 3 Mio. Rentner. Das Kindergeld würde tatsächlich halbiert.

– Aller Voraussicht würde das mit der Wirtschaftsgemeinschaft und Währungsunion verfolgte Ziel gefährdet, die Menschen zu bewegen, in ihrer Heimat zu bleiben; denn das Wohlstandsgefälle würde nicht kleiner werden, sondern wachsen. Und wer könnte dann tatsächlich den Menschen verwehren, von Ost- nach West-Berlin zu gehen, im Zonenrandgebiet auf bundesdeutscher Seite einen Wohn- oder Scheinwohnsitz zu nehmen?

– Gemeinsame Auffassung ist, mit der Wirtschaftsgemeinschaft auch die Sozialgemeinschaft aufzubauen. Der künftige Sozialstaat Deutschland braucht eine darstellbare, konkrete Perspektive. Daran haben wir in den zurückliegenden Wochen – teilweise auch mit der DDR – intensiv gearbeitet. Es ist erklärtes Prinzip dieser Regierung, nicht willkürlich Leistungen abzuschneiden, sondern auf der Grundlage der gleichen Prinzipien die Sozialsysteme zu verschränken und so den gemeinsamen Sozialstaat herzustellen. Bei einem Umstellungssatz von 2:1 läßt sich dieses Konzept nicht verwirklichen. Leistungen der Sozialversicherung wie die Renten würden zur Existenzsicherung deutlich nicht ausreichen. Dann aber verliert eine Sozialversicherung innere Logik wie Akzeptanz.

– Es besteht in der Sozialpolitik gesetzgeberischer Handlungsbedarf in unmittelbarem Zusammenhang mit der Wirtschaftsgemeinschaft und Währungsunion. Nach geltendem Recht erhalten Empfänger von Eingliederungsgeld und Renten unter den Übersiedlern deutlich höhere Leistungen, als sie künftig erwarten können. Entsprechende Gesetzentwürfe, die dies ändern, sind ressortintern auf der Grundlage eines Umstellungssatzes von 1:1 vorbereitet. Eine Ausgestaltung beispielsweise eines Arbeitslosengeldes auf Grundlage der Werte in der DDR und eines de facto halbierten Bruttolohns – wie im vorgelegten Modell des Bundesfinanzministeriums vorgesehen – läßt sich im Zeitraum vor einer Umstellung wegen

zu befürchtender Konsequenzen beim Übersiedlerstrom nicht darstellen. Im übrigen dürfte ein solcher Gesetzesvorschlag auf der Grundlage von 2:1 gegenüber den Ländern wegen der entstehenden, ergänzenden Sozialhilfeansprüche nicht durchsetzbar sein.

– Übersiedler, die nur ihre abgewerteten Ansprüche aus der DDR mitbrächten, würden in aller Regel hier Sozialhilfeempfänger. Bei Ungleichbehandlung von Aus- und Übersiedlern bei Renten und Eingliederungsgeld wären die Einkommensunterschiede nicht vertretbar, bei Gleichbehandlung würden – DDR-Niveau unterstellt – auch die Aussiedler hier regelmäßig zu Empfängern von Sozialhilfe, sofern sie nicht direkt erwerbstätig werden können.

Jedes dieser Argumente könnte vertieft, eine Fülle weiterer dargelegt werden. Die beigegefügte Ausarbeitung gibt dazu weitere Hinweise.¹

Die Entscheidung über den Umstellungssatz ist für uns und vor allem für die Menschen in der DDR eine einschneidende, weitreichende Entscheidung. In Anbetracht der in der DDR und hier anstehenden demokratischen Entscheidungen kommt es deshalb um so mehr darauf an, das in diese Regierung gesetzte Vertrauen nicht zu enttäuschen.

Mit freundlichen Grüßen

Ihr
Norbert Blüm

¹ Anlage in der einschlägigen Akte nicht vorhanden.

문서 번호 27

중앙은행위원회(Zentralbankrat)의 결정

1990 년 4 월 3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수상실

내용:

독일 양국의 정치적 통일에 대한 목표와 이와 관련된 독일 마르크 화폐영역의 동독 지역으로의 확대에 대해서 중앙은행위원회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다음 규정을 동독과의 국가조약을 통해 명시한다.

출처: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Bundesarchiv: BArch, B 136123744,44-.68018 De 2 Bd. 8. - Az. 42 - 35006 - De 13.)

Nr. 239A
Entschließung des Zentralbankrats

Im Hinblick auf die beabsichtigte politische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und die in diesem Zusammenhang vorgesehene Ausweitung des Währungsgebietes der D-Mark auf das Gebiet der DDR hält der Zentralbankrat folgende Regelungen im Rahmen eines Staatsvertrages mit der DDR für unerlässlich (Ziff. 1 sowie 3 bis 6) bzw. wünschenswert (Ziff. 2):

- 1 Alle am Umstellungstag auf Mark der DDR lautenden Schuldenverhältnisse (einschließlich der Verbindlichkeiten aus laufenden Transaktionen) sind im Verhältnis 2 Mark der DDR : 1 DM umzustellen. Ausgenommen hiervon sind Bankguthaben von natürlichen

- Personen (einschließlich des auf diesen eingezahlten Bargeldes) bis zu einem Betrag von 2000 Mark je Einwohner der DDR, die im Verhältnis 1:1 umgestellt werden. Über die Bankkonten kann nach Umstellung frei verfügt werden.
- 2 Im Hinblick auf die notwendigen Abstriche an den über 2000 DM je Kopf hinausgehenden privaten Einlagen soll die Bundesregierung in Verhandlungen mit der DDR auf eine Regelung hinwirken, die eine Beteiligung der Sparer an dem Treuhandvermögen und Privatisierungsvermögen in der DDR sicherstellt.
 - 3 Der Staatsvertrag muß sicherstellen, daß in der DDR auf währungspolitischem Gebiet ausschließlich das Bundesbankgesetz und die von der Bundesbank erlassenen Anordnungen gelten. Dazu gehört, daß die geldpolitischen Entscheidungen des Zentralbankrates in der DDR durchgesetzt werden können.
 - 4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muß die Deutsche Bundesbank für das Gebiet der DDR vorläufig eine Verwaltungsstelle in Berlin und ca. 15 Zweiganstalten in der DDR errichten können.
 - 5 Das KWG ist in der DDR einzuführen, die Niederlassungsfreiheit für Kreditinstitute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Ausland zu gewähren; Vorschriften über Zinsbindungen und Devisenbeschränkungen sind aufzuheben.
 - 6 Die Kreditaufnahme öffentlicher Stellen in der DDR ist zu limitieren.

문서 번호 28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와 동독 소련 간의 경제관계

1990 년 4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경제장관 하우스만, 수상청 루데비히 국장, 소련 부총리 시타얀, 소련
외무차관 오브민스키, 키브친스키 소련대사

내용:

이 문서는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연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1990 년 4 월에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 중에 소련 대표단과 서독 연방정부의 대표들이 만나서 동독과 소련 간의 경제관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 대표단은 소련이 서독과 화폐경제사회연합을 구성하더라도 동독이 필요하다면 서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소련에 대한 지불의무를 계속 이행해 주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다. 그에 대해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장관 하우스만은 서독 또한 소련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먼저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우선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동독을 제외하고 소련과 서독이 양국 간의 직접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KAmt/212 - 35400 De 39 NA 2 Band 3

V e r m e r k

Betr.: Wirtschaftsbeziehungen DDR-Sowjetunion im Zusammenhang mit der Währungsunion mit Wirtschafts- und Sozialgemeinschaft (WWU) mit der DDR

Der aktuelle Sachstand hierzu ergibt sich aus einem Gespräch, das BM Dr. Hausmann am 9.4.1990 mit dem stv. sowjetischen MP Sitarjan am Rande der Bonner KSZE-Konferenz geführt hat. An diesem Gespräch haben außerdem Botschafter Kwizinskij und der stv. Außenminister Obminski teilgenommen.

In dem einstündigen Gespräch konzentrierte sich das sowjetische Interesse auf die Fragen, die sich im Hinblick auf die WWU und die spätere Einheit Deutschlands aus den außenwirtschaftlichen Verpflichtungen der DDR gegenüber der Sowjetunion ergeben:

- Die UdSSR erwarte zusätzliche Impulse für die sowjetische Wirtschaft, die über die bisherige Zusammenarbeit m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mit der DDR noch hinausgehen. Das gelte sowohl für den Handel als auch für die Kooperation bis hin zu Joint Ventures.
- Auch die UdSSR wolle möglichst schnell in ihrem internationalen Handel auf konvertible Währungen übergehen, spätestens ab 1991. Hier stelle sich dann die schwierige Frage der künftigen Preise. Das gelte auch gerade im Verhältnis zur DDR. Für die UdSSR vordringlich sei die Preisgestaltung bei den umfangreichen Öl- und Gaslieferungen in der DDR.

Im übrigen gehe die UdSSR generell davon aus, daß die DDR die übernommenen Verpflichtungen auf der Export- und Importseite einhalten werde, ggfs. mit Hilfe der Bundesregierung, falls sie selbst dazu nicht in der Lage sei.

Stv. MP Sitarjan erklärte im übrigen, er sei derzeit noch nicht in der Lage, zu allen wichtigen Fragen spezifische Aussagen machen zu können. Man habe die Situation mit der DDR bereits mehrfach erörtert und warte nun auf die neue Regierung, mit der man die Gespräche unverzüglich (bilateral) fortsetzen wolle.

Was die Gespräche mi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außenwirtschaftlichen Verpflichtungen der DDR betreffe, so sehe man auch hier unverzüglichen Gesprächsbedarf, sei aber der Meinung, daß die Gespräche trilateral zwischen UdSSR, Bundesregierung und der neuen DDR-Regierung geführt werden sollten. Das sei auch der Grund dafür, daß er über unser Angebot zu bilateralen Gesprächen (zunächst auf Expertenebene) noch nicht entschieden habe.

BM Dr. Haussmann verwies auf das große Interesse der Bundesregierung, nach den Gesprächen mit den DDR-Experten auch mit der sowjetischen Seite über die Problematik zu sprechen. Wir seien allerdings der Auffassung, daß es ratsam sei, zunächst zur Feststellung der gegenseitigen Interessenlage bilateral miteinander zu sprechen, nicht zuletzt zur Vorbereitung der Reise von StS Dr. von Würzen am 14./15. Mai 1990 und vor allem der bevorstehenden Wirtschaftskommission am 21./22. Mai 1990 in Moskau.

Stv. MP Sitarjan erklärte hierzu, er werde sich das noch überlegen und eine Entscheidung nach seiner Rückkehr nach Moskau treffen.

Zusätzliche Anmerkung:

Nach Information aus dem AA hat stv. MP Sitarjan im nachfolgenden Gespräch mit BM Genscher am 10. April 1990 wiederum die Position der sofortigen trilateralen Gespräche vertreten.

Ludewig
(Dr. Ludewig)

문서 번호 29

경제화폐사회통합 조약 초안에 대한 서베를린 시정부의 입장

1990 년 4 월 27 일

담당자 / 기관: 서베를린 시정부 시장실 슈뢰더, 수상청장 자이터스

내용:

이 문서는 서베를린 시장실장 디터 슈뢰더가 수상청장 루돌프 자이터스에게 보낸 것으로 동서독 간의 경제화폐사회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서베를린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문서를 통해 서베를린 시정부가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통일된 베를린에도 기존의 연방국가와 법칙국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소위 말하는 동독식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독 지도부의 엘리트들을 가능한한 수용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지자체와 기초단체들 그 외의 행정단위들 간의 협력과 관련된 조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 동독정부에 의한 통제를 폐지해야 한다.
- 베를린시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베를린 시정부와 협의한다.
- 통일된 베를린의 행정주체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력을 강화한다.
- 동베를린에 소재한 문화기구의 조직과 재정은 국가가 관리한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Kopie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Zielformat: Archiv Bundesstiftung Aufarbeitung,
Markus Meckel, Akte

Der Chef der Senatskanzlei, Rathaus Schöneberg, D-1000 Berlin 62

Per Telefax

GeopZ (bei Antwort bitte angeben)
11 B 1 - 7104/02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Herrn Bundesminister
Dr. Rudolf Seiters

Zimmer

Fernruf 78 31 (Vermittlung)

Apparat (Durchwahl 783 + App.-Nr.)

3510 Intern (90)
Datum

27. April 1990

Betr.: Entwurf ein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union, Wirtschafts- und Sozialgemeinschaft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and 24. April 1990

Sehr geehrter Herr Bundesminister,

unter Bezugnahme auf die gestrige Besprechung und Unterrichtung
darf ich Ihnen im Hinblick auf die laufenden Verhandlungen
zwischen beiden deutschen Regierungen eine erste vorläufige
Stellungnahme zu dem Vertragsentwurf bzw. Arbeitspapier
übermitteln. Die Chefs der Staats- und Senatskanzleien der
anderen Länder erhalten eine Durchschrift dieses Schreibens.

Nach erster Durchsicht des Vertragsentwurfs bzw. Arbeitspapiers
ergeben sich aus Berliner Sicht folgende Anmerkungen, wobei Sie
Verständnis haben werden, daß Berlin sich weitere Stellungnahmen
vorbehält:

1. Zu Art. 2 Absätze 1 und 2

- Bundesstaats- und Rechtsstaatprinzip sollten als zentrale
Verfassungsgrundsätze in Abs. 1 genannt werden.
Entsprechend wäre das Bundesstaatsprinzip in Teil A I
Ziff. 1 der Leitsätze zu nennen.
- Korrespondierend mit der Nennung des Bundesstaatsprinzips
in Abs. 1 sollte in Abs. 2 ein letzter Spiegelstrich
eingefügt werden, wonach die entgegenstehenden
Rechtsvorschriften über den in der DDR sogenannten
demokratischen Zentralismus nicht mehr angewendet werden

("- über den demokratischen Zentralismus"). Auch hier müßte eine entsprechende Ergänzung in Teil A I Ziff. 2 der Leitsätze vorgenommen werden.

- Abs. 2 sollte insgesamt so formuliert werden, daß nicht nur entgegenstehende Vorschriften der DDR-Verfassung, sondern des DDR-Rechts insgesamt erfaßt werden (Formulierungsvorschlag: "Entgegenstehende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Grundlagen ...").

2. Zu Art. 3 Satz 2

Die gesetzestechnisch und sachlich sicher gerechtfertigte dynamische Verweisung sollte durch politische Mitwirkungsmöglichkeiten für die DDR ergänzt werden. Angesichts der Bedeutung des demokratischen Prozesses in der DDR halte ich es für unerlässlich, daß Änderungen von Bundesrecht (Gesetze und Verordnungen), die zukünftig automatisch auch für die DDR gelten sollen, vorher im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ß gemäß Art. 7 des Vertragsentwurfs erörtert werden und daß die Möglichkeit einer beratenden Beteiligung beim Gesetzgebungsverfahren in Bundestag und Bundesrat bzw. deren Ausschüssen in geeigneter Weise eröffnet wird.

Im Zusammenhang verstärkter Beteiligung der DDR stellt sich meines Erachtens auch die Frage, ob und inwieweit geeignetes Personal aus der DDR insbesondere auch in Führungspositionen bei den in Art. 3 Satz 3 genannten Behörden in angemessener Weise Verwendung finden sollte. Es bestehen nach den hiesigen praktischen Erfahrungen bei den Mitarbeitern der DDR-Verwaltungen erhebliche Befürchtungen vor der Übernahme einer Vielzahl von Verwaltungsfunktionen durch Beamte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zw. ihren Ländern. Es wäre daher zu erwägen, ob nicht der Grundsatz fixiert werden sollte, daß für die Erledigung der Aufgaben in der DDR in aller Regel - von Ausnahmefällen abgesehen, die im Vertrag geregelt sind - Verwaltungskräfte der DDR eingesetzt werden. Für eine derartige Regelung gibt es ein Vorbild, das ähnlichen Ängsten der Badener beim Zusammenschluß im Südweststaat begegnen sollte (Art. 91 der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Bei den Ministerien und sonstigen obersten Landesbehörden sollen Beamte aus den bisherigen Ländern in angemessenem Verhältnis verwendet werden").

3. Zu Art. 4 i.V.m. mit den Leitsätzen des Gemeinsamen Protokolls

- Teil A I Ziff. 3 Satz 2: Die Voraussetzungen von Genehmigungsvorbehalten sind eindeutig "durch Gesetz" zu bestimmen.

- Im Hinblick auf die notwendige Zusammenarbeit von Ländern, Kreisen, Gemeinden und sonstigen Verwaltungsträgern wie z.B. den Trägern der Sozialversicherung, insbesondere im grenznahen Bereich und im Raum Berlin sollte folgende Ziff. 4 aufgenommen werden:

"4.: Die DDR fördert die Zusammenarbeit von Gebietskörperschaften und sonstigen Verwaltungsträgern insbesondere im grenznahen Bereich und im Raum Berlin. Der Aufbau paralleler Verwaltungseinrichtungen ist insbesondere dadurch zu vermeiden, daß bestehende Einrichtungen von Gebietskörperscha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eitmöglichst mitgenutzt oder anderweitige geeignete Formen gemeinschaftlicher Nutzung vereinbart werden."

- In Teil A Abschnitt II - Wirtschaftsgemeinschaft - wäre in Ziff. 6 die Sozialbindung des Eigentums an Grund und Boden zu nennen.
- In Teil A Abschnitt II - Wirtschaftsgemeinschaft - Ziff. 7 sollte ergänzt werden, daß bei Grundstücksverkehrsgenehmigungen nicht nur generell auf die Förderung wirtschaftlicher Investitionen Bedacht zu nehmen ist, sondern auch auf die Belange der Raumordnung, des Umweltschutzes und des sozialen Wohnungsbaus.
- In Teil A Abschnitt II - Wirtschaftsgemeinschaft - Ziff. 8 müßte neben der Überführung von DDR-Staatseigentum in Privateigentum auch die Möglichkeit der Überführung in "Formen der Gemeinwirtschaft" genannt werden, um u.a. die in Berlin bestehende Rechtsform der kommunalen Versorgungs- und Verkehrsbetriebe für Gesamt-Berlin beibehalten zu können (siehe dazu unten Ziff. 10).

4. Zu Art. 7

Angesichts des Umstandes, daß Berlin im Gegensatz zur Lage bei allen anderen Ländern durch die Vereinigung der Stadt unmittelbar mit der DDR konfrontiert wird, halte ich es für unabdingbar, daß Berlin in geeigneter Weise an dem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ß beteiligt wird. Im übrigen dürfte sich auch die Frage der Beteiligung der Länder insgesamt am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ß stellen.

5. Zu Art. 8

Auch bei Vertragsänderungen ist die rechtzeitige und umfassende Beteiligung Berlins ebenso wie der anderen Länder erforderlich.

6. Zu Art. 11 Abs. 3

Angesichts der politischen Entwicklung sind keinerlei Kontrollen mehr akzeptabel, die das bisherige Grenzregime an den innerdeutschen Grenzen perpetuieren. Deshalb sollte sowohl der baldmöglichste Wegfall der Kontrollen einschließlich der Verplombung für den Güterverkehr gemäß Transitabkommen angestrebt werden als auch bereits mit Inkrafttreten des Staatsvertrages alle Personenkontrollen an den innerdeutschen Grenzen, insbesondere auch beim Eisenbahnverkehr zur Vermeidung unnötiger Grenzaufenthalte, entfallen. Lediglich für den Warenverkehr erscheinen Übergangsregelungen notwendig. Praktisch notwendig ist eine "Einreise-Union" beider deutscher Staaten für den Verkehr mit dem Ausland. Berlin ist in diesem Zusammenhang intensiv bemüht, daß die hier noch bestehende Regelung der BK/O (67) 7 vom 17. Juli 1967 betreffend den Aufenthalt von Ausländern von der Alliierten Kommandantur aufgehoben wird.

7. Zu Art. 14 Abs. 2

Unklar erscheint, was unter dem Begriff "neue Anlagen und Einrichtungen" zu verstehen ist. Gehören dazu auch bereits projektierte und genehmigte, jedoch noch nicht begonnene oder noch nicht in Betrieb genommene Anlagen? Praktische Probleme in der Umgebung Berlins lassen es notwendig erscheinen, daß hier mit Auflagen und Genehmigungsänderungen noch Einfluß im Sinne des Umweltschutzes genommen wird bzw. die DDR sich hierzu im Vertrag verpflichtet. Zugleich müssen diese Auflagen so differenziert sein, daß sie nicht Produktionseinrichtungen in einer Weise belasten, die zu Massenentlassungen und damit sozialen Unruhen führen.

8. Zu Art. 16 - 19

Hier zeigt sich insbesondere die Notwendigkeit der oben unter Ziff.3., 2. Anstrich, angeregten Ergänzung: Es darf nicht sein, daß in Ost-Berlin eigene Einrichtungen und berufsständische Versorgungswerke (Art. 19 Abs. 7) geschaffen werden; hier sind sofort Formen gemeinsamer Trägerschaft oder einer Funktionsübernahme durch entsprechende hiesige (West-Berliner) Einrichtungen zu ermöglichen, sei es in Form der Organleihe, sei es in Form von besonderen Verwaltungsgemeinschaften (Beispiele: AOK Berlin, LVA Berlin, Kassen(Zahn)ärztliche Vereinigung Berlin, Ärztekammern usw.).

Wolff
Bundesschriftung
Thomas Meckel, Akt

9. Zu Art. 21 Abs. 2 Satz 1

Die Anpassung an die Haushaltsstruktur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uß sich auf das Haushaltsrecht der jeweils entsprechenden Gebietskörperschaften beziehen. Deshalb wäre hinter dem Wort Haushaltsstrukturen einzufügen: "... der entsprechenden Gebietskörper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s ist im Hinblick auf die Zusammenführung beider Teile Berlins unabdingbar. In diesem Zusammenhang ist darauf hinzuweisen, daß für Ost-Berlin bereits mit der Kommunalwahl am 6. Mai 1990 der erste "Landtag" gewählt wird und deshalb in der Anlage II zum Vertragsentwurf unter Ziff. 6 für Ost-Berlin eine Sonderregelung dergestalt eingefügt werden muß, die die Anwendung des im Westteil der Stadt geltenden Haushaltsrechts sicherstellt.

In Art. 21 Abs. 3 Satz 3 aE ist eine entsprechende Ergänzung wie in Abs. 2 Satz 1 erforderlich ("... entsprechend den Strukturen der jeweiligen Gebietskörper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In Art. 21 fehlt eine Bestimmung, die generelle Prüfungsvereinbarungen zwischen den Rechnungshöf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entsprechenden Stellen in der DDR zuläßt. Es wird deshalb vorgeschlagen, entweder Art. 21 um einen Absatz 4 zu ergänzen oder eine entsprechende Formulierung in Anlage II Ziff. 5 zum Vertragsentwurf anzubringen: "Sind für die Prüfung sowohl Rechnungshöf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auch die Finanzkontrolle der DDR zuständig, so soll gemeinsam geprüft werden. Soweit nicht die Prüfung durch einen bestimmten Rechnungshof verfassungsrechtlich vorgeschrieben ist, können die Rechnungshöf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Finanzkontrolle der DDR einander durch Vereinbarung Prüfungsaufgaben übertragen."

10. Zu Art. 21 Abs. 2, 2. und 3. Anstrich

Im Hinblick insbesondere auf die Vereinigung Berlins und die Belange der kommunalen Verkehrsbetriebe muß auch die Umwandlung von Wirtschaftsunternehmen sowie Versorgungs- und Verkehrsbetrieben in die Form nichtrechtsfähiger kommunaler Wirtschaftsbetriebe ("Eigenbetriebe") ermöglicht werden. In dieser Form werden im Westteil der Stadt die Berliner Verkehrsbetriebe, die Berliner Gaswerke, die Berliner Wasserbetriebe, die Berliner Hafen- und Lagerhaus-Betriebe und die Berliner Stadtreinigungsbetriebe geführt. Abweichende Rechtsformen in Ost-Berlin würden die Zusammenführung der Betriebe unnötig komplizieren, wenn nicht verhindern.

11. Zu Art. 21 Abs. 3 Satz 2, 2. Anstrich

Die generelle Forderung nach nachhaltiger Absenkung der Personalausgaben im Öffentlichen Dienst der DDR muß nach den hiesigen praktischen Erfahrungen mit Ost-Berlin dahin modifiziert werden, daß es in weiten Bereichen primär um die Optimierung des Einsatzes des vorhandenen Personals geht. In Ost-Berlin ist es z.B. ein Problem, die Stadtbezirke, die Großstädten entsprechen, personalmäßig so auszustatten, daß sie überhaupt in der Lage sind, die Vielzahl neuer, bisher nicht wahrgenommener Aufgaben im Bereich insbesondere der Wirtschafts- und Sozialverwaltung zu übernehmen. Dieser Personalmehrbedarf kann nur teilweise durch Umschichtungen von der Magistratsebene auf die Stadtbezirksebene erreicht werden. Nach den hiesigen bisherigen Erfahrungen ist in Teilbereichen also durchaus mit einer Personalverstärkung im Öffentlichen Dienst zu rechnen.

12. Zu Art. 21 Abs. 3 Satz 2, 4. Anstrich

Die Strukturverbesserung muß den gesamten Kulturbereich umfassen und darf sich nicht nur auf das Bildungswesen beschränken. Die nach föderalen Grundsätzen erforderliche Entflechtung der derzeit staatlichen Institutionen im Kulturbereich darf allerdings nicht zu unverhältnismäßigen Belastungen der Haushalte der Gebietskörperschaften führen. Zentrale staatliche Großinstitutionen, insbesondere in Ost-Berlin, wie z.B. di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ie Staatlichen Museen, Theater und Hochschulen, müßten solange von zentraler Ebene finanziert werden, bis eine endgültige räumliche Entflechtung, die Trägerschaft und die zukünftige Finanzierung geklärt sind. Insbesondere dürfen nicht sämtliche Hauptstadt- und Regierungslasten auf den Ost-Berliner Stadthaushalt und bei der Vereinigung beider Stadtteile entsprechend auf den Gesamtberliner Landeshaushalt durchschlagen.

13. Zu Art. 22

- In Abs. 1 ist im Hinblick auf den Haushalt Ost-Berlins das Einvernehmen auch mit dem Senator für Finanzen des Landes Berlin erforderlich (Formulierungsvorschlag: hinter dem Wort Deutschland wird eingefügt: "und im Hinblick auf Berlin im Einvernehmen mit der Senatsverwaltung für Finanzen des Landes Berlin").
- Die Verlagerung der bis zur Vereinigung aufgelaufenen Verschuldung des Zentralstaats auf die DDR-Nachfolgeländer ist keinesfalls akzeptabel (Abs.3). Dies wäre allenfalls in gewissem Umfang diskutierbar im Zusammenhang mit einer nach bundesstaatlichem Verständnis der Lastenverteilung zwischen Bund und Länder vorgenommenen Kompetenz- und

Aufgabenentflechtung in der DDR. Für Berlin bedeutet dies im Hinblick auch auf die gesonderte Stellung des Landes Berlin im Finanz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hilfe), daß die auf Ost-Berlin entfallenden Zentralstaatslasten (Kosten der Hauptstadt- und Regierungsfunktion nebst Folgekosten) auf der Ebene des Zentralstaats bzw. später der Bundesebene verbleiben müssen. Weitere Stellungnahme hierzu bleibt vorbehalten.

14. Zu Art. 24 Satz 2

Im Hinblick auf die zukünftige Länder-Struktur der DDR sollte klargestellt werden, daß das Landespersonalvertretungsrecht unberührt bleibt.

15. Zu Art. 29

Hier gelten sinngemäß meine Anmerkungen zu oben Ziff. 3. Insbesondere für Berlin ist von vornherein die Bildung einer gemeinsamen Finanzverwaltung und Finanzgerichtsbarkeit zu ermöglichen und die Schaffung von Parallel-Institutionen in Ost-Berlin zu vermeid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noch auf Art. 11 der Anlage I zum Vertragsentwurf hinzuweisen: Ich gehe davon aus, daß die dort genannt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der Deutschen Bundesbank in Ost-Berlin bei Vereinigung Berlins Teil der hiesigen Landeszentralbank wird bzw. daß die hiesige Landeszentralbank für Gesamtberlin zuständig wird.

16. Zu Art. 31 (Berlin-Klausel)

Nicht recht verständlich erscheint, daß trotz der deutschlandpolitischen Entwicklung unverändert an der bisherigen Frank-Falin-Klausel festgehalten wird. Der Entwicklung angemessener wäre folgende Formulierung: "Beide Seiten stimmen überein, daß dieser Vertrag (entsprechend dem Vier-Mächte-Abkommen vom 3. September 1971) auch in Berlin gilt". Dies insbesondere, weil der Vertrag Ost-Berlin durchweg als integralen Bestandteil der DDR behandelt.

17. Im Hinblick auf die angestrebte Wirtschaftsgemeinschaft sollte vereinbart werden, daß auch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m Verkehr m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schließlich Berlin (West) für sämtliche Postdienste mit Inkrafttreten des Vertrages Inlandsgebühren anstelle der bisherigen unverhältnismäßig hohen Auslandsgebühren erhebt.

18. Wie das Atomrecht sollten auch die wesentlichsten Vorschriften des Umweltrechts mit der Wirtschaftsgemeinschaft in Kraft treten und nicht auf den unbestimmten "weiteren Verlauf" gemäß

Anlage VI zum Vertragsentwurf verlagert werden. Insbesondere fehlt das Gesetz zu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nd da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19. Im Vertragsentwurf fehlt eine Grundsatzaussage zum Datenschutz. Angesichts der Bedeutung dieses Gegenstandes auch im Hinblick auf die innenpolitische Entwicklung und Diskussion in der DDR sollte diese Aussage in Kapitel I des Vertragsentwurfes und die Geltung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und der Landesdatenschutzgesetze in Anlage II aufgenommen werden.

Unter Bezugnahme auf die Absprache des Herrn Bundeskanzlers mit den Regierungschefs der Länder vom 15. Februar 1990, meine Erklärung in unserer Besprechung am 2. März 1990, daß die Beteiligung der Länder die bewährte enge Abstimmung der Berlin- und Deutschlandpolitik zwischen dem Bund und Berlin nicht erübrigt, wobei der Bund insbesondere berücksichtigt, daß das gesamte Berliner Verfassungs- und einfache Landesrecht von der Entwicklung in Deutschland unmittelbar berührt wird, und unter Bezugnahme auf unsere Besprechung am 26. April 1990 gehe ich davon aus, daß Berlin an allen Verhandlungen unmittelbar beteiligt wird. Ich bitte um Mitteilung der Termine.

Die Senatsverwaltung für Justiz des Landes Berlin habe ich gebeten, ihre Anregungen zu einzelnen Rechtsfragen des Vertrages unmittelbar dem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zuzuleiten.

Mit freundlichen Grüßen



Prof. Dr. Dieter Schröder

문서 번호 30

동서독 정부가 작성한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구성에 관한 실무문서에 관한 소련의 입장표명 -
동독 정부에게 제시

1990 년 4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소련 외무장관, 동독 외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동서독 정부 간에 진행되던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대해서 소련 측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990 년 4 월에 소련 외무성은 서독 정부가 본에 있는 소련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실현 조약에 관해 동독 대표와 논의하기 위한 실무안“을 전달받았고 그에 관해서 소련의 입장과 질의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서를 동독의 외무부에 전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안을 보면 독일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승전연합국이 독일문제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나아가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동서독 정부는 국제조약의 대상국이 유럽공동체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체결한 모든 조약의 규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2. 화폐경제공동체조약의 초안을 보면 2+4 회의에서 먼저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상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초안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 23 조에 따라 통일된 국가를 건국“한다는 조항이 그런 문제가 있다.
3. 이 조약이 4 대 승전연합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조치와 결정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4. 연방정부의 부처나 연방은행과 같은 서독의 관청이 동독 영토에서 활동을 할 경우 동독의 법질서와 동독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을 준수해야만 한다.
5. 화폐공동체를 도입하는 것은 소련과 다른 국가의 이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6. 소련은 조약 초안 중에서 상호경제원조와 관련하여 동독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2 조 12 항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7. 동독영토에 주둔한 소련군의 잔류여부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8. 이 조약이 비스무트 독소합작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합작회사는 동독의 튜링겐과 작센지역의 광산에서 우라늄을 생산하던 회사로 소련의 핵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9. 이 조약으로 인해 동독과 소련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조약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10.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모두 2+4 협상의 외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 문제들이 불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 다른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31

Von SU am 30.4. Inoffizielle Übersetzung

AIDE-MEMOIRE

Zitierweise: Archiv Bundesstiftung Aufarbeitung,
Markus Meckel, Akte 631

Im Zusammenhang mit dem "Arbeitspapier für Gespräche mit der DDR über einen Vertrag über die Herbeiführung einer Währungsunion, Wirtschafts- und Sozialgemeinschaft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das an die Botschaft der UdSSR in der BRD überreicht wurde, hält das Außenministerium der UdSSR es für notwendig, einige Überlegungen zu den Fragen zu äußern, die die Interessen der Sowjetunion direkt betreffen.

1. Vor allem möchten wir hervorheben, daß das "Arbeitspapier" bedauerlicherweise die grundlegende Tatsache nicht berücksichtigt, daß die Rechte und Verantwortlichkeiten der Vier Mächte für Deutschland als Ganzes und für Berlin bis zur Herbeiführung einer deutschen Friedensregelung in Kraft bleiben. Es ist auch zu beachten, daß die BRD und die DDR an diese Rechtsbestimmung gebunden sind und im vollen Maße die Verantwortung auch für die Erfüllung der Verpflichtungen aus den internationalen bi- und multilateralen Verträgen tragen, die sie früher abgeschlossen hatten. Ein selektives Herangehen an diese Verpflichtungen und vor allem die Hervorhebung nur der Verträge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ls solche, die die Währungs-, Wirtschafts-, Zoll- sowie andere Ordnung auf dem Territorium der Gemeinschaft der zwei deutschen Staaten bestimmen, wäre eine Diskriminierung der Rechte der Staaten, die nicht Teilnehmer von EG sind.

Es scheint deshalb notwendig, in einen eventuellen Vertrag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über die Herbeiführung einer Währungsunion, einer Wirtschafts- und Sozialgemeinschaft eine gemeinsame Klausel darüber aufzunehmen, daß die internationalen Verpflichtungen der BRD und der DDR aus früher abgeschlossenen Verpflichtungen und Vereinbarungen durch den Vertrag nicht betroffen sind sowie die konkreten Bestimmungen des Vertragsentwurfs, die dieser Grundsatzbestimmung widersprechen könnten, damit in Einklang zu bringen sind.

2. Die Verhandlungen über die äußeren Aspekte der Vereinigung der BRD und der DDR im Rahmen des Mechanismus "2 + 4", der in Ottawa am 13. Februar 1990 gebildet wurde, befinden sich bekanntlich erst im Anfangsstadium. Dementsprechend dürfen keine Bestimmungen des Vertragsentwurfes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über di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die Lösung der Fragen des internationalen Status des künftigen einheitlichen Deutschlands, seiner politischen, militärischen und anderen Verpflichtungen sowie der generellen Richtung seiner Politik vorbestimmen. Die Aufnahme solcher Bestimmungen in den Vertrag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vor dem Abschluß der Verhandlungen "2 + 4" würde das Übersteigen der Kompetenz der BRD und der DDR bedeuten und darf nicht geschehen. Das betrifft insbesondere die Bestimmungen des Entwurfes über die "Schaffung der Staatseinheit gemäß Artikel 23 des Grundgesetzes der BRD", die die Präambel und einige Paragraphen des Vertrages enthalten, sowie die Verpflichtung der DDR, ihre Politik auf die "Rechte und Ziele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rt. 10, Par. 3) zu orientieren, die aber nicht nur wirtschaftlichen, sondern auch politischen Charakter tragen.

3. Nichts soll im Vertragsentwurf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Veranlassung geben, die Legitimität der Maßnahmen und Beschlüsse in Frage zu stellen, die in den Fragen der Entnazifizierung, Entmilitarisierung und Demokratisierung von den Vier Mächten gemeinsam oder von ihnen jeweils in ihren ehemaligen Besatzungszonen ergriffen wurden. Die Rechtmäßigkeit dieser Beschlüsse, insbesondere zu den Vermögens- und Bodenfragen, unterliegt keiner Neuüberprüfung oder Neubewertung durch die deutschen Gerichte oder anderen deutschen Staatsorgane.

Das betrifft auch diejenigen Verpflichtungen, die die DDR zur Änderung ihrer Verfassung und der Gesetze über das sozialistische Eigentum in Stadt und Land übernehmen soll.

4. Aus dem Vertragsentwurf geht hervor, daß vorgesehen ist, eine Reihe von BRD-Behörden zu berechtigen, eine direkte Kompetenz in Fragen, die durch den Vertrag geregelt werden, auf dem Territorium der DDR auszuüben (Bundesministerien, Bundesbank u.a.). Eine solche Kompetenz kann jedoch nur in dem Umfang ausgeübt werden, in welchem die BRD-Behörden in ihren Handlungen nicht nur an die Gesetze der BRD, sondern auch an die in der DDR geltende Ordnung, die aus den von ihr übernommenen internationalen Verpflichtungen resultiert, gebunden wären.

5. Die Regelung für den Umtausch der Währung eines deutschen Staates in die Währung des anderen deutschen Staates kann nicht nur durch Kriterien der Aufrechterhaltung der Währungsstabilität, der Nichtzulassung von Inflation und Defiziten bestimmt werden (Art. 9 u.a.). Es ist ein nichtdiskriminierendes Herangehen an die finanziellen Interessen des sowjetischen Staates, der sowjetischen juristischen und physischen Personen in der DDR zu gewährleisten. Dasselbe, wie es scheint, muß auch die Interessen anderer Staaten, ihrer juristischen und physischen Personen betreffen, wenn das zukünftige einheitliche Deutschland nicht wünscht, von Anfang an in Widerspruch mit diesen zu kommen. Wir möchten hoffen, daß die BRD und die DDR keine Verträge miteinander zum Nachteil dritter Staaten abschließen werden.

6. Die sowjetische Seite akzeptiert die Bedeutung des Paragraphen 2 des Art. 12 des Vertragsentwurfes über die Verpflichtungstreue der DDR gegenüber den RGW-Ländern, hält aber diesen Artikel für unzureichend. Hier braucht man eine genauere Definition.

7. Im Zusammenhang mit dem Vertragsentwurf bedürfen die Fragen der Sicherung des Aufenthaltes der sowjetischen Truppen auf dem Territorium der DDR einer Klärung. Das betrifft sowohl die Fragen des Geldumtausches als auch die der Aufhebung der Subventionierung der Preise für Lebensmittel, Konsumgüter, Wohnungsmieten usw. Hinzu kommen die Fragen der Ausgaben für die Unterhaltung der sowjetischen Einrichtungen in der DDR,

für das Entsenden der sowjetischen Vertreter und Fachleute im Rahmen des bilateralen Austausches, für die Reisen der sowjetischen Touristen sowie Privatreisen der Bürger. Der Abschluß des Vertrages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darf nicht zur Verschlechterung der bestehenden Bedingungen führen, die durch das System der vertraglichen Verpflichtungen zwischen der UdSSR und der DDR gewährleistet werden.

8. Die sowjetische Seite möchte Garantien bekommen, daß keinerlei Bestimmungen des von der BRD vorgeschlagenen Vertragsentwurfes mit der DDR negative Auswirkungen auf die Lage und Tätigkeitsbedingungen der SDAG "Wismut" haben werden.

9. Was die sozialen Regelungen betrifft, so geht die sowjetische Seite davon aus, daß Maßnahmen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der Auszahlungen von Renten und Geldunterstützungen getroffen werden, die vom Vertrag über die Zusammenarbeit im Bereich der sozialen Versicherung zwischen der UdSSR und der DDR vom 24. Mai 1960 festgelegt wurden, und keine Diskriminierung der Bürger der UdSSR in diesen Fragen zustande kommt.

10. Die oben aufgezählten Fragen betreffen die äußeren Aspekte der Vereinigung. Deren unbefriedigende Lösung würde einer Behandlung im Rahmen "2 + 4" bedürfen und könnte die Lösung der anderen Fragen, die mit der Abstimmung der äußeren Aspekte der Vereinigung zusammenhängen, aufhalten.

Die sowjetische Seite erwartet, daß die obengenannten Überlegungen im Geiste des gegenseitigen Einvernehmens zwischen unseren Ländern und entsprechend der von der Regierung der BRD mehrmals geäußerten Bereitschaft, die legitimen Interessen der Sowjetunion bei der Realisierung der praktischen Maßnahmen zur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gebührendermaßen zu berücksichtigen, behandelt werden.

Selbstverständlich behält sich die sowjetische Seite das Recht vor, sich zu den berührten Fragen im Rahmen der zwei- und dreiseitigen Konsultationen (UdSSR-BRD-DDR) und - wenn die Notwendigkeit entsteht - auch im Rahmen der "Sechs" zusätzlich zu äußern.

28. April 1990

문서 번호 31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

1990 년 5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연방은행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연방보험감독청(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상호경제원조평의회(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유럽연맹(Europäische Gemeinschaft)

내용:

• 제 1 장 기초(제 1-9 항) : 1990 년 7 월 1 일부터 독일마르크(DM)는 공동 화폐, 연방은행은 발권은행이 된다. 이전의 모든 동독 마르크(DDR-Mark) 관련 의무 및 요구사항들은 독일 마르크로 변경된다. 동독에서는 환경보호를 고려한 사회 시장경제가 도입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법과 사회적 안정이 보장된다. 동독의 헌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보험감독청은 동독에서도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관청은 상호 간 업무를 지원한다. 동독에는 자유 사법상의 중재 판정법이 도입된다. 노동 재판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동등한 재판소에서 결정권을 위임한다. 서독과 동독 정부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 II 장 화폐통합에 대한 규정(제 10 항) : 연방은행은 양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연방은행법 제 12 조). 동독 금융시장은 민간 경제 신용은행 체제, 자유로운 금융 및 자본시장 그리고 엄격히 규제된 이자율 체제를 도입한다. 봉급, 임금, 장학금, 연금, 임대료, 임차료 및 기타 지급수단은 1:1 로 전환한다. 다른 모든 의무사항과 관련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2:1 로 전환한다. 이는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계좌를 둔 사람과 직장에만 적용된다.

• 제 III 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제 11-16 항) : 동독은 고정가격, 높은 고용률, 현대적인 작업장과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1951 년 이후 서독과 동독 사이에 존재했던 무역거래는 철폐되고 내국 규제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제거된다. 동독은 국제 경제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상호경제원조평의회 국가들과의 관계는 확대된다. 동독은 서독과 함께 동독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 제 IV 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제 17-25 항) :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은 국가 감독 하에 있는 자치 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특히 사업자와 고용인에 의해 반반씩 부담된다.

1991년 1월 1일까지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형성된다. 보험의무 및 의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고 호봉 등은 서독의 사회보험법에 따라 제정된다. 능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도입되고 이에 따르는 직업교육과 재교육이 실시된다. 이때 특히 여성과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들이 고려된다. 동독 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은 서독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병고 시의 보상지급 등 포함). 이전까지 획득한 연금 청구권 및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은 동독의 임금과 봉급 수준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 제 V 장 국가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규정(제 26-34 항) 제 26 항(재정정책): 동독의 국가 예산은 서독의 예산구조에 맞게 조정된다. 동독 국가 예산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회분야, 경제기업, 운수업, 독일 제국철도와 도이치포스트의 운영. 동독의 지방 자치 단체들의 예산 삭감: 예산 보조금의 철폐, 인건비의 삭감, 모든 지출내용의 검사, 교육제도의 구조개선 및 연방 구조의 도입(연구분야 포함). 국유 재산은 검토하여 구조개선 및 동독 국가 예산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제 27 항(신용거래 및 채무): 동독 지방 자치 단체들의 신용 권한은 1990년에 100억 DM에서 1991년에 140억 DM으로 제한된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1990년에 70억 DM과 1991년에 100억 DM의 신용 권한 제한이 적용된다. 제 28 항(서독의 재정 지급): 서독은 동독 국가 예산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220억 DM 그리고 1991년에 350억 DM을 지원하였다. 서독은 또한 동독 연금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7억 5천 DM 그리고 동독 실업보험을 위해 1990년 2분기에 20억 DM, 1991년에는 30억 DM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1971년에 도입된 서독과 베를린(서) 사이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및 통관을 위해 통과국이 지불하는 일괄 사용료는 더 이상 서독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서독은 또한 여행자 외화기금에 더 이상 불입하지 않는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제 29 항(공공 서비스): 동독은 연방인원대표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을 규정에 맞게 적용한다. 제 30 항(관세 및 소비세): 동독은 단계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조세법을 적용한다. 소비세의 제한규정은 철폐된다(담배 제외). 제 31 항(재산세 및 교통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서독과 동독 사이에 세금제한선 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주권은 간접 받지 않는다. 사전 세금 공제에 대한 권한은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에 귀속되는 매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일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해당 계약 상대자만 과세를 한다. 쌍방향 계약 상대자의 무제한 세금 의무의 경우, 생활의 중심 정도 및 영업소의 위치에 따라 과세를 한다. 다른 계약 상대자의 경우, 상대방의 국내재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제 32 항(정보교환): 서독과 동독은 세법과 독점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 33 항(이중과세): 재산세와 교통세의 이중과세는 서독과 동독 재정장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방지하도록 한다. 제 34 상(재무 행정의 구조): 동독은 서독 재무 행정의 법에 상응하는 3단계 재무 행정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 및 관세 행정청을 설립한다.

지도 원칙에 관한 공동 프로토콜:

- 일반 지도 원칙 : 동독은 유럽공동체 법(EG-Recht)을 토대로 한다. 민간 경제와 자유경쟁은 우선시된다. 계획규정은 철폐된다. 자유로운 가격형성 및 토지와 땅과 기타 경제활동을 위한 제품수단의 취득, 권한 및 이용은 자유롭다. 국영 기업체의 경제적으로 및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최대한 민영화한다. 서독의 우체국법(Poststrukturgesetz, 우편신고제도 및 통신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단체 및 조합은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다. 회원은 언제든지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국가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 개별 법 분야의 지도 원칙: 법원과 의회는 분리되고 재판관의 보고의무는 철폐된다. 토지 저당권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다. 보험 독점체제와 국제 무역 독점체제는 폐지된다. 동독의 통계는 서독의 통계에 따라 조정된다. 동독은 서독의 건축법전(Baugesetzbuch)과 공간이용법(Raumordnungsgesetz)에 부합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서독 사람들은 동독에서 임시적으로 서독 법에 따라 고용될 수 있다. 동독의 노동보호법은 서독의 노동보호법에 맞게 조정된다.

부록

- 명시된 서독 법과 법규정에 관한 수정사항 및 독일 연방은행, 연방은행감독청 및 연방보험감독청의 규정에 관한 수정 사항은 앞으로 동독에서도 적용되며.

- 샤로텐부르크 지방법원(서베를린)은 신용제도의 업무 일부를 위임하게 된다.

- 1973 년 12 월 19 일에 제정된 동독의 통화법(Devisengesetz)(GBI. 1 Nr. 58 S.574)은 폐지되고 동독 국립은행은 해체된다.

- 동독에 주거지, 본거지 또는 공장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의 영업활동 또는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법안이 제정된다. 또한 서독과의 합의 하에 외국과의 화물, 서비스, 자본 및 지불 유통에 관한 법안과 규정, 가격형성과 가격감독에 관한 법안, 동독과 서독의 주민 등록 관청 간의 데이터 교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독의 세무 상담과 회계 감사법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1991 년 1 월 1 일까지).

- 그 외에도 고용장려법, 장애인법, 병고 시의 보상지급법, 사회보험법, 연금조정법, 노동법상 중재 위원회에 관한 법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제정된다.

출처: 연방법률관보. 1990 II 537 쪽, 제 9 항, 1998 년 6 월 9 일에 제정된 법 (BGBl. I S. 1242)

(BGBl. 1990 II S.537, Art 9 3 Gesetz vom 09.06.1998 (BGBl. I S. 1242))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WSUVtr

Ausfertigungsdatum: 18.05.1990

Vollzitat: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8. Mai 1990 (BGBl. 1990 II S. 537), die durch Artikel 9 § 3 des Gesetzes vom 9. Juni 1998 (BGBl. I S. 1242) geändert worden ist"

Stand: Geändert durch Art. 9 § 3 G v. 9.6.1998 I 1242

Fußnote

Textnachweis ab: 30.6.1990 Maßgaben aufgrund des EinigVtr vgl. WWSUVtr Anhang EV G v. 25.6.1990 II 518

Inkraft gem. Bek. v. 17.7.1990 II 700 mWv 30.6.1990

Die Hohen Vertragschließenden Seiten -
dank der Tatsache, daß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Herbst 1989 eine friedliche und demokratische Revolution stattgefunden hat,
entschlossen, in Freiheit die Einheit Deutschlands in eine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alsbald zu vollenden,
in dem gemeinsamen Willen, die Soziale Marktwirtschaft als Grundlage für die weitere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mit sozialem Ausgleich und sozialer Absicherung und Verantwortung gegenüber der Umwelt auch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zuführen und hierdurch die Lebens- und Beschäftigungsbedingungen ihrer Bevölkerung stetig zu verbessern,
ausgehend von dem beiderseitigen Wunsch, durch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einen ersten bedeutsamen Schritt in Richtung auf die 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nach Artikel 23 des Grund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Beitrag zur europäischen Einig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Tatsache zu unternehmen, daß die äußeren Aspekte der Herstellung der Einheit Gegenstand der Gespräche mit den Regierungen der Französischen Republik,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Großbritannien und Nordirland und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sind,
in der Erkenntnis, daß mit der 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die Entwicklung föderativer Struktur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hergeht,
in dem Bewußtsein, daß die Regelungen dieses Vertrags die Anwendung des Rechts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nach 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gewährleisten sollen -
sind übereingekommen, einen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mit den nachfolgenden Bestimmungen zu schließen:

Kapitel I Grundlagen

Art 1 Gegenstand des Vertrags

(1) Die Vertragsparteien errichten ein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2) Die Vertragsparteien bild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eine Währungsunion mit einem einheitlichen Währungsgebiet und der Deutschen Mark als gemeinsamer Währung. Die Deutsche Bundesbank ist die Währungs- und Notenbank dieses Währungsgebiets. Die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Verbindlichkeiten und Forderungen werden nach Maßgabe dieses Vertrags auf Deutsche Mark umgestellt.

(3) Grundlage der Wirtschaftsunion ist die Soziale Marktwirtschaft als gemeinsame Wirtschaftsordnung beider Vertragsparteien. Sie wird insbesondere bestimmt durch Privateigentum, Leistungswettbewerb, freie Preisbildung und grundsätzlich volle Freizügigkeit von Arbeit, Kapital,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hierdurch wird die gesetzliche Zulassung besonderer Eigentumsformen für die Beteiligung der öffentlichen Hand oder anderer Rechtsträger am Wirtschaftsverkehr nicht ausgeschlossen, soweit private Rechtsträger dadurch nicht diskriminiert werden. Sie trägt den Erfordernissen des Umweltschutzes Rechnung.

(4) Die Sozialunion bildet mit der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eine Einheit. Sie wird insbesondere bestimmt durch ein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entsprechende Arbeitsrechtsordnung und ein auf den Prinzipien der Leistungsgerechtigkeit und des sozialen Ausgleichs beruhendes umfassendes System der sozialen Sicherung.

Art 2 Grundsätze

(1) Die Vertragsparteien bekennen sich zu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föderativen, rechtsstaatlichen und sozialen Grund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in diesem Vertrag oder in Ausführung dieses Vertrags begründeten Rechte garantieren sie insbesondere die Vertragsfreiheit, Gewerbe-, Niederlassungs- und Berufsfreiheit, die Freizügigkeit von Deutschen in dem gesamten Währungsgebiet, die Freiheit,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ereinigungen zu bilden, sowie nach Maßgabe der Anlage IX das Eigentum privater Investoren an Grund und Boden sowie an Produktionsmitteln.

(2) Entgegenstehende Vorschriften der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Grundlagen ihrer bisherig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 und Staatsordnung werden nicht mehr angewendet.

Art 3 Rechtsgrundlagen

Für die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und die Währungsumstellung gelten die in der Anlage I aufgeführten vereinbarten Bestimmungen. Bis zur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werden die in der Anlage II bezeichnete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den Gebieten des Währungs-, Kredit-, Geld- und Münzwesens sowie der Wirtschafts- und Sozialunio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Kraft gesetzt; danach gelten sie in der jeweiligen Fassung im gesamten Währungsgebiet nach Maßgabe der Anlage II, soweit sich aus diesem Vertrag nichts anderes ergibt. Die Deutsche Bundesbank, das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und das 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üben die ihnen nach diesem Vertrag und nach diesen Rechtsvorschriften zustehenden Befugnisse im gesamten Geltungsbereich dieses Vertrags aus.

Art 4 Rechtsanpassung

(1) Für die mit der Erricht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erforderliche Rechtsanp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 die in Artikel 2 Absatz 1 niedergelegten Grundsätze und die im Gemeinsamen Protokoll vereinbarten Leitsätze; fortbestehendes Recht ist gemäß diesen Grund- und Leitsätzen auszulegen und anzuwend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hebt bis zur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die in der Anlage III bezeichneten Vorschriften auf oder ändert sie und erläßt die in der Anlage IV bezeichneten neuen Rechtsvorschriften, soweit nicht im Vertrag oder in den Anlagen ein anderer Zeitpunkt festgelegt ist.

(2)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absichtigten Änderungen von Rechtsvorschriften sind in der Anlage V aufgeführt.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absichtigten Regelungen sind in der Anlage VI aufgeführt.

(3) Bei der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gelten die in der Anlage VII enthaltenen Grundsätze.

Art 5 Amtshilfe

Die Behörden der Vertragsparteien leisten sich nach Maßgabe des innerstaatlichen Rechts bei der Durchführung dieses Vertrags Amtshilfe. Artikel 32 bleibt unberührt.

Art 6 Rechtsschutz

(1) Wird jemand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in seinen durch diesen Vertrag oder in Ausführung dieses Vertrags gewährleisteten Rechten verletzt, so steht ihm der Rechtsweg zu den Gerichten offen. Soweit eine andere Zuständigkeit nicht begründet ist,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gewährleistet gerichtlichen Rechtsschutz einschließlich eines effektiven einstweiligen Rechtsschutzes. Soweit für öffentlich-rechtliche Streitigkeiten keine besonderen Gerichte bestehen, werden Spezialspruchkörper bei den ordentlichen Gerichten eingerichtet. Die Zuständigkeit für diese Streitigkeiten wird bei bestimmten Kreis- und Bezirksgerichten konzentriert.

(3) Bis zum Aufbau einer besonderen Arbeitsgerichtsbarkeit werden Rechtsstreitigkeiten zwischen Arbeitgebern und Arbeitnehmern aus dem Arbeitsverhältnis von neutralen Schiedsstellen entschieden, die paritätisch mit Arbeitgebern und Arbeitnehmern sowie einem neutralen Vorsitzenden zu besetzen sind. Gegen ihre Entscheidung können die staatlichen Gerichte angerufen werden.

(4)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läßt eine freie Schiedsgerichtsbarkeit auf dem Gebiet des Privatrechts zu.

Art 7 Schiedsgericht

(1) Streitigkeiten über die Auslegung oder Anwendung dieses Vertrags einschließlich des Gemeinsamen Protokolls und der Anlagen werden durch die Regierungen der beiden Vertragsparteien im Verhandlungswege beigelegt.

(2) Kann eine Streitigkeit auf diese Weise nicht beigelegt werden, so kann jede Vertragspartei die Streitigkeit einem Schiedsgericht zur Entscheidung vorlegen. Die Vorlage ist unabhängig davon zulässig, ob in der Angelegenheit gemäß Artikel 6 ein staatliches Gericht zuständig ist.

(3) Das Schiedsgericht setzt sich aus einem Präsidenten und vier Mitgliedern zusammen. Innerhalb einer Frist von einem Monat nach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ernennt die Regierung einer jeden Vertragspartei zwei ordentliche und zwei stellvertretende Mitglieder. Innerhalb der gleichen Frist werden der Präsident und der Stellvertreter des Präsidenten im Einvernehmen zwischen den Regierungen der beiden Vertragsparteien ernannt. Werden die in Satz 2 und 3 genannten Fristen nicht eingehalten, so werden die erforderlichen Ernennungen vom Präsidenten des Gerichtshofs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vorgenommen.

(4) Die Amtszeit beträgt zwei Jahre.

(5) Der Präsident und die Mitglieder des Schiedsgerichts üben ihr Amt unabhängig und frei von Weisungen aus. Vor Beginn ihrer Tätigkeit übernehmen der Präsident und die Mitglieder des Schiedsgerichts die Verpflichtung, ihre Aufgabe unabhängig und gewissenhaft zu erfüllen und das Beratungsgeheimnis zu wahren.

(6) Die Bestimmungen über die Einberufung und das Verfahren des Schiedsgerichts sind in der Anlage VIII geregelt.

Art 8 Gemeinsamer Regierungsausschuß

Die Vertragsparteien bilden einen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ß. Sie werden in diesem Ausschuß Fragen der Durchführung des Vertrags erörtern und - soweit erforderlich - das notwendige Einvernehmen herstellen. Zu den Aufgaben des Ausschusses gehört auch die Beilegung von Streitigkeiten gemäß Artikel 7 Absatz 1.

Art 9 Vertragsänderungen

Erscheinen Änderungen oder Ergänzungen dieses Vertrags erforderlich, um eines seiner Ziele zu verwirklichen, so werden sie zwischen den Regierungen der Vertragsparteien vereinbart.

Kapitel II

Bestimmungen über die Währungsunion

Art 10 Voraussetzungen und Grundsätze

(1) Durch die Errichtung einer Währungsunion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ist die Deutsche Mark Zahlungsmittel, Rechnungseinheit und Wertaufbewahrungsmittel im gesamten Währungsgebiet. Zu diesem Zweck wird die geldpolitische Verantwortung der Deutschen Bundesbank als alleiniger Emissionsbank dieser Währung auf das gesamte Währungsgebiet ausgeweitet. Das Recht zur Ausgabe von Münzen obliegt ausschließlich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Die Nutzung der Vorteile der Währungsunion setzt einen stabilen Geldwert für die 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aus, ebenso muß die Währungsstabilitä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währleistet bleiben. Die Vertragsparteien wählen deshalb Umstellungsmodalitäten, die keine Inflationsimpulse im Gesamtbereich der Währungsunion entstehen lassen und gleichzeitig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Unternehm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ärken.

(3) Die deutsche Bundesbank regelt durch den Einsatz ihrer Instrumente in eigener Verantwortung, gemäß § 12 Bundesbankgesetz unabhängig von Weisungen der Regierungen der Vertragsparteien, den Geldumlauf und die Kreditversorgung im gesamten Währungsgebiet mit dem Ziel, die Währung zu sichern.

(4) Voraussetzung für die monetäre Steuerung ist, daß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in marktwirtschaftliches Kreditsystem aufbaut. Dazu gehört ein nach privatwirtschaftlichen Grundsätzen operierendes Geschäftsbankensystem im Wettbewerb privater, genossenschaftlicher und öffentlich-rechtlicher Banken, ein freier Geld- und Kapitalmarkt und eine nicht reglementierte Zinsbildung an den Finanzmärkten.

(5) Um die in den Absätzen 1 bis 4 bezeichneten Ziele zu erreichen, vereinbaren die Vertragsparteien nach näherer Maßgabe der in der Anlage I niedergelegten Bestimmungen folgende Grundsätze für die Währungsunion:

- Mit Wirkung vom 1. Juli 1990 wird die Deutsche Mark als Währ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geführt. Die von der Deutschen Bundesbank ausgegebenen, auf Deutsche Mark lautenden Banknoten und die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gegebenen, auf Deutsche Mark oder Pfennig lautenden Bundesmünzen sind vom 1. Juli 1990 an alleiniges gesetzliches Zahlungsmittel.
- Löhne, Gehälter, Stipendien, Renten, Mieten und Pachten sowie weitere wiederkehrende Zahlungen werden im Verhältnis 1 zu 1 umgestellt.
- Alle anderen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werden grundsätzlich im Verhältnis 2 zu 1 auf Deutsche Mark umgestellt.
- Die Umstellung von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Banknoten und Münzen ist nur für Personen oder Stellen mit Wohnsitz oder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onten bei Geldinstitu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öglich, auf die die umzustellenden Bargelddbeträge eingezahlt werden können.

- Guthaben bei Geldinstituten von natürlichen Personen mit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auf Antrag bis zu bestimmten Betragsgrenzen im Verhältnis 1 zu 1 umgestellt, wobei eine Differenzierung nach dem Lebensalter des Berechtigten stattfindet.
- Sonderregelungen gelten für Guthaben von Personen, deren Wohnsitz oder Sitz sich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findet.
- Mißbräuchen wird entgegengewirkt.

(6) Nach einer Bestandsaufnahme des volkseigenen Vermögens und seiner Ertragsfähigkeit sowie nach seiner vorrangigen Nutzung für die Strukturanpassung der Wirtschaft und für die Sanierung des Staatshaushalts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nach Möglichkeit vorsehen, daß den Sparern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für den bei der Umstellung 2 zu 1 reduzierten Betrag ein verbrieftes Anteilsrecht am volkseigenen Vermögen eingeräumt werden kann.

(7) Die Deutsche Bundesbank übt die ihr nach diesem Vertrag und nach dem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zustehenden Befugnisse im gesamten Währungsgebiet aus. Sie errichtet zu diesem Zweck ein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in Berlin mit bis zu fünfzehn Filial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ozu die Betriebsstellen der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nutzt werden.

Kapitel III

Bestimmungen über die Wirtschaftsunion

Art 11 Wirtschaftspolitische Grundlagen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tellt sicher, daß ihre wirtschafts- und finanzpolitischen Maßnahmen mit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in Einklang stehen. Die Maßnahmen werden so getroffen, daß sie im Rahmen der 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gleichzeitig zur Stabilität des Preisniveaus, zu einem hohen Beschäftigungsstand und zu außenwirtschaftlichem Gleichgewicht bei stetigem und angemessenem Wirtschaftswachstum beitragen.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chafft die Rahmenbedingungen für die Entfaltung der Marktkräfte und der Privatinitiative, um den Strukturwandel, die Schaffung moderner Arbeitsplätze, eine breite Basis aus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sowie freien Berufen und den Schutz der Umwelt zu fördern. Die Unternehmensverfassung wird so gestaltet, daß sie auf den in Artikel 1 beschriebenen Prinzipi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mit der freien Entscheidung der Unternehmen über Produkte, Mengen, Produktionsverfahren, Investitionen, Arbeitsverhältnisse, Preise und Gewinnverwendung beruht.

(3)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richtet ihre Politik unter Beachtung ihrer gewachsenen außenwirtschaftlichen Beziehungen mit den Ländern des Rates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schrittweise auf das Recht und die wirtschaftspolitischen Ziele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s.

(4)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bei Entscheidungen, welche die wirtschaftspolitischen Grundsätze der Absätze 1 und 2 berühren, das Einvernehmen mi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Rahmen des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sses nach Artikel 8 herstellen.

Art 12 Innerdeutscher Handel

(1) Das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vereinbarte Berliner Abkommen vom 20. September 1951 wird im Hinblick auf die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angepaßt. Der dort geregelte Verrechnungsverkehr wird beendet und der Abschlußsaldo des Swing wird ausgeglichen. Bestehende Verpflichtungen werden in Deutscher Mark abgewickelt.

(2) Die Vertragsparteien stellen sicher, daß Waren, die nicht Ursprungswar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über die innerdeutsche Grenze in einem zollamtlich überwachten Verfahren befördert werden.

(3) Die Vertragsparteien sind bestrebt, so bald wie möglich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n vollständigen Wegfall der Kontroll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zu schaffen.

Art 13 Außenwirtschaft

(1) Bei der Gestaltung des freien Außenwirtschaftsverkehrs träg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en Grundsätzen eines freien Welthandels, wie sie insbesondere im Allgemeinen Zoll- und Handelsabkommen (GATT) zum Ausdruck kommen, Rechnung.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d zur weiteren Integration der 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ie Weltwirtschaft ihre Erfahrungen umfassend zur Verfügung stellen.

(2) Die gewachsenen außenwirtschaftlichen Bezieh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sbesondere bestehende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gegenüber den Ländern des Rates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genießen Vertrauensschutz. Sie werd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gebenheiten der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und der Interessen aller Beteiligten fortentwickelt sowie unter Beachtung marktwirtschaftlicher Grundsätze ausgebaut. Soweit erforderlich, werden bestehende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Einvernehmen mit ihren Vertragspartnern an diese Gegebenheiten angepaßt.

(3) Zur Vertretung der außenwirtschaftlichen Interessen arbeiten die Vertragsparteien unter Beachtung der Zuständigkei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eng zusammen.

Art 14 Strukturanpassung der Unternehmen

Um die notwendige Strukturanpassung der Unternehm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fördern, wird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Rahmen der haushaltspolitischen Möglichkeiten während einer Übergangszeit Maßnahmen ergreifen, die eine rasche strukturelle Anpassung der Unternehmen an die neuen Marktbedingungen erleichtern. Über die konkrete Ausgestaltung der Maßnahmen verständigen sich die Regierungen der Vertragsparteien. Ziel ist es, auf der Grundlage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die Leistungsfähigkeit der Unternehmen zu stärken und durch die Entfaltung privater Initiative eine breit gefächerte, moderne Wirtschaftsstruktur auch mit möglichst vielen kleinen und mittleren Betrieb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rreichen, um so die Grundlage für mehr Wachstum und zukunftssichere Arbeitsplätze zu schaffen.

Art 15 Agrar- und Ernährungswirtschaft

(1) Wegen der zentralen Bedeutung der Regelung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für die Agrar- und Ernährungswirtschaft führ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in Preisstützungs- und Außenschutzsystem entsprechend dem EG-Marktordnungssystem ein, so daß sich die landwirtschaftlichen Erzeugerpreis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n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gleich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keine Abschöpfungen und Erstattungen gegenüber den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einführen, soweit diese entsprechend verfahren.

(2) Für Warenbereiche, für die die Einführung eines vollständigen Preisstützungssystems noch nicht sofort mit dem Inkrafttreten dieses Vertrages möglich ist, können Übergangslösungen angewandt werden. Bis zur rechtlichen Integration der Agrar- und Ernährungswir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n EG-Agrarmarkt sind bei sensiblen Agrarerzeugnissen im Handel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spezifische mengenmäßige Regelungsmechanismen möglich.

(3) Unbeschadet der Maßnahmen nach Artikel 14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m Rahmen der haushaltspolitischen Möglichkeiten während einer Übergangszeit den in der Agrar- und Ernährungswirtschaft erforderlichen strukturellen Anpassungsprozeß zur Verbesserung der Wettbewerbsfähigkeit der Betriebe, zur umwelt- und

qualitätsorientierten Produktion sowie zur Vermeidung von Überschüssen durch geeignete Maßnahmen fördern.

(4) Über die konkrete Ausgestaltung der in den Absätzen 2 und 3 genannten Maßnahmen verständigen sich die Regierungen der Vertragsparteien.

Art 16 Umweltschutz

(1) Der Schutz von Menschen, Tieren und Pflanzen, Boden, Wasser, Luft, Klima und Landschaft sowie von Kultur- und sonstigen Sachgütern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ist besonderes Anliegen beider Vertragsparteien. Sie lassen sich dabei von dem Vorsorge-, Verursacher- und Kooperationsprinzip leiten. Sie streben die schnelle Verwirklichung einer deutschen Umweltunion an.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trifft Regelungen, die mit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sicherstellen, daß auf ihrem Gebiet für neue Anlagen und Einrichtungen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n Sicherheits- und Umweltschutzanforderungen Voraussetzung für die Erteilung umweltrechtlicher Genehmigungen sind. Für bestehende Anlagen und Einrichtungen triff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Regelungen, die möglichst schnell zu entsprechenden Anforderungen führen.

(3)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parallel zur Entwicklung des föderativen Staatsaufbaus auf Länderebene und mit dem Entstehen ein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das Umwelt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nehmen.

(4) Bei der weiteren Gestaltung eines gemeinsamen Umweltrechts werden die Umwelanford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 schnell wie möglich auf hohem Niveau angeglichen und weiterentwickelt.

(5)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harmonisiert die Bestimmungen zur staatlichen Förderung von Umweltschutzmaßnahmen mit den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apitel IV

Bestimmungen über die Sozialunion

Art 17 Grundsätze der Arbeitsrechtsordn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 Koalitionsfreiheit, Tarifautonomie, Arbeitskampfrecht, Betriebsverfassung, Unternehmensmitbestimmung und Kündigungsschutz entsprechend de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äheres ergibt sich aus dem Gemeinsamen Protokoll über die Leitsätze und den Anlagen II und III.

Art 18 Grundsätze der Sozialversicherung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hrt ein gegliedertes System der Sozialversicherung ein, für das folgende Grundsätze gelten:

1. Die Renten-, Kranken-, Unfall-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werden jeweils durch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ter der Rechtsaufsicht des Staates durchgeführt.
2. Die Renten-, Kranken-, Unfall-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einschließlich der Arbeitsförderung werden vor allem durch Beiträge finanziert. Die Beiträge zur Renten-, Kranken-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werden grundsätzlich je zur Hälfte von Arbeitnehmern und Arbeitgebern entsprechend den Beitragssätz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zur Unfallversicherung von den Arbeitgebern getragen.
3. Lohnersatzleistungen orientieren sich an der Höhe der versicherten Entgelte.

(2) Zunächst werden die Aufgaben der Renten-, Kranken- und Unfallversicherung von einem gemeinsamen Träger durchgeführt; die Einnahmen und Ausgaben werden getrennt nach den Versicherungsarten erfaßt und abgerechnet. Möglichst bis zum 1. Januar 1991 werden für die Renten-, Kranken- und Unfallversicherung eigenständige Träger gebildet. Ziel dabei

ist eine Organisationsstruktur der Sozialversicherung, die 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icht.

(3)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ann für eine Übergangszeit die bestehende umfassende Sozialversicherungspflicht beibehalten werden. Für Selbständige und freiberuflich Tätige soll bei Nachweis einer ausreichenden anderweitigen Sicherung eine Befreiung von der Sozialversicherungspflicht vorgesehen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wird die Errichtung von berufsständischen Versorgungswerken außerhalb der Rentenversicherung ermöglicht.

(4) Lohnempfänger, deren Lohneinkünfte im letzten Lohnabrechnungszeitraum vor dem 1. Juli 1990 einem besonderen Steuersatz gemäß § 10 der Verordnung vom 22. Dezember 1952 über die Besteuerung des Arbeitseinkommens (GBl. Nr. 182 S. 1413) unterlagen, erhalten bis zum 31. Dezember 1990 zu ihrem Rentenversicherungsbeitrag einen Zuschuß bei einem Monatslohn

- bis 600 Deutsche Mark in Höhe von 30 Deutsche Mark,
- über 600 bis 700 Deutsche Mark in Höhe von 20 Deutsche Mark,
- über 700 bis 800 Deutsche Mark in Höhe von 10 Deutsche Mark.

Lohneinkünfte aus mehreren Arbeitsverhältnissen werden zusammengerechnet. Der Zuschuß wird dem Lohnempfänger vom Arbeitgeber ausgezahlt. Der Arbeitgeber erhält diese Aufwendungen auf Antrag aus dem Staatshaushalt erstattet.

(5) Die Versicherungspflicht- und die Beitragsbemessungsgrenzen werden nach den Grundsätzen des Sozialversicher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estgelegt.

Art 19 Arbeitslosenversicherung und Arbeitsförderung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hrt ein System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einschließlich Arbeitsförderung ein, das den Regelungen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icht. Dabei haben Maßnahmen der aktiven Arbeitsmarktpolitik, wie berufliche Bildung und Umschulung, besondere Bedeutung. Belange der Frauen und Behinderten werden berücksichtigt. In der Übergangsphase wird Besonderhei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chnung getragen. Die Regierungen beider Vertragsparteien werden beim Aufbau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einschließlich Arbeitsförderung eng zusammenarbeiten.

Art 20 Rentenversicherung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leitet alle erforderlichen Maßnahmen ein, um ihr Rentenrecht an das auf dem Grundsatz der Lohn- und Beitragsbezogenheit beruhende Rentenversicher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zugleichen. Dabei wird in einer Übergangszeit von fünf Jahren für die rentennahen Jahrgänge dem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Rechnung getragen.

(2) Die Rentenversicherung verwendet die ihr zur Verfügung stehenden Mittel ausschließlich zur Erfüllung der ihr obliegenden Aufgaben bei Rehabilitation, Invalidität, Alter und Tod. Die bestehenden Zusatz- und Sonderversorgungssysteme werden grundsätzlich zum 1. Juli 1990 geschlossen. Bisher erworbene Ansprüche und Anwartschaften werden in die Rentenversicherung überführt, wobei Leistungen aufgrund von Sonderregelungen mit dem Ziel überprüft werden, ungerechtfertigte Leistungen abzuschaffen und überhöhte Leistungen abzubauen. Die der Rentenversicherung durch die Überführung entstehenden Mehraufwendungen werden ihr aus dem Staatshaushalt erstattet.

(3) Die Bestandsrenten der Rentenversicherung werden bei Umstellung auf Deutsche Mark auf ein Nettorentenniveau festgesetzt, das bei einem Rentner mit 45 Versicherungsjahren/Arbeitsjahren, dessen Verdienst jeweils dem volkswirtschaftlichen Durchschnittsverdienst entsprochen hat, 70 vom Hundert des durchschnittlichen Nettoarbeitsverdienste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ägt. Bei einer größeren oder geringeren Zahl von Versicherungsjahren/Arbeitsjahren ist der Prozentsatz entsprechend höher oder niedriger. Basis für die Berechnung des Anhebungssatzes der individuell bezogenen Renten ist die nach Zugangsjahren gestaffelte Rente eines Durchschnittsverdiener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r von seinem

Einkommen neben den Pflichtbeiträgen zur Sozialversicherung volle Beiträge zur freiwilligen Zusatz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zahlt hat. Soweit hiernach eine Anhebung nicht erfolgt, wird eine Rente in Deutscher Mark gezahlt, die der Höhe der früheren Rente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spricht. Die Hinterbliebenenrenten werden von der Rente abgeleitet, die der Verstorbene nach der Umstellung erhalten hätte.

(4) Die Renten der Rentenversicherung werden entsprechend der Entwicklung der Nettolöhne und -gehält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gepaßt.

(5) Die freiwillige Zusatzrentenversicher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geschlossen.

(6)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beteiligt sich an den Ausgaben ihrer Rentenversicherung mit einem Staatszuschuß.

(7) Personen, die nach dem 18. Mai 1990 ihren gewöhnlichen Aufenthalt aus dem Gebiet der einen Vertragspartei in das Gebiet der anderen Vertragspartei verlegt haben, erhalten von dem bisher zuständigen Rentenversicherungsträger ihre nach den für ihn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berechnete Rente für die dort zurückgelegten Zeiten.

Art 21 Krankenversicherung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leitet alle erforderlichen Maßnahmen ein, um ihr Krankenversicherungsrecht an da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zugleichen.

(2) Leistungen, die bisher nach den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s der Krankenversicherung finanziert worden sind, die aber nach de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cht Leistungen der Krankenversicherung sind, werden vorerst aus dem Staats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inanziert.

(3)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hrt eine Entgeltfortzahlung im Krankheitsfall ein, die den gesetzlichen Regelungen der Entgeltfortzahl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icht.

(4) Die Rentner sind in der Krankenversicherung versichert. Maßgebend ist der jeweilige Beitragssatz in der Krankenversicherung. Die Krankenversicherungsbeiträge der Rentner werden von der Rentenversicherung an die Krankenversicherung pauschal abgeführt. Die Höhe des pauschal abzuführenden Betrages bestimmt sich nach dem Gesamtbetrag der Renten vor Abzug des auf die Rentner entfallenden Anteils am Krankenversicherungsbeitrag. Das bei der Umstellung der Renten vorgesehene Nettorentenniveau bleibt davon unberührt.

(5) Die Investitionen bei stationären und ambulanten Einrichtungen des Gesundheitswesen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aus Mitteln des Staatshaushalts und nicht aus Beitragsmitteln finanziert.

Art 22 Gesundheitswesen

(1) Die medizinische Betreuung und der Schutz der Gesundheit der Menschen sind besonderes Anliegen der Vertragsparteien.

(2) Neben der vorläufigen Fortführung der derzeitigen Versorgungsstrukturen,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medizinischen Versorgung der Bevölkerung notwendig ist,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chrittweise eine Veränderung in Richtung des Versorgungsangebo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privaten Leistungserbringern vornehmen, insbesondere durch Zulassung niedergelassener Ärzte, Zahnärzte und Apotheker sowie selbständig tätiger Erbringer von Heil- und Hilfsmitteln und durch Zulassung privater und frei-gemeinnütziger Krankenhausträger.

(3) Zum Aufbau der erforderlichen vertraglichen, insbesondere vergütungsrechtlichen Beziehungen zwischen Trägern der Krankenversicherung und den Leistungserbringern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ie erforderlichen gesetzlichen Rahmenbedingungen schaffen.

Art 23 Renten der Unfallversicherung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leitet alle erforderlichen Maßnahmen ein, um ihr Unfallversicherungsrecht an da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zugleichen.

(2) Die Bestandsrenten der Unfallversicherung werden bei der Umstellung auf Deutsche Mark auf der Grundlage des durchschnittlichen Bruttoarbeitsentgelt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eu festgesetzt und gezahlt.

(3) Nach der Umstellung auf Deutsche Mark neu festzusetzende Unfallrenten werden auf der Grundlage des durchschnittlichen monatlichen Bruttoarbeitsentgelts der letzten zwölf Monate vor dem Unfall festgesetzt.

(4) Artikel 20 Absatz 4 und 7 gilt entsprechend.

Art 24 Sozialhilfe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hrt ein System der Sozialhilfe ein, das dem Sozialhilfe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icht.

Art 25 Anschubfinanzierung

Soweit in einer Übergangszeit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Beiträge und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Beiträge und der Staatszuschuß die Ausgaben für die Leistungen nicht voll abdecken, leiste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ine vorübergehende Anschubfinanzierung im Rahmen der nach Artikel 28 zugesagten Haushaltshilfe.

Kapitel V

Bestimmungen über den Staatshaushalt und die Finanzen

1. Abschnitt Staatshaushalt

Art 26 Grundsätze für die Finanzpoliti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 Die öffentlichen Haushal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von der jeweiligen Gebietskörperschaft grundsätzlich in eigener Verantwortung unter Beachtung der Erfordernisse des gesamtwirtschaftlichen Gleichgewichts aufgestellt. Ziel ist eine in die marktwirtschaftliche Ordnung eingepaßte Haushaltswirtschaft. Die Haushalte werden in Einnahmen und Ausgaben ausgeglichen. Alle Einnahmen und Ausgaben werden in den jeweiligen Haushaltsplan eingestellt.

(2) Die Haushalte werden den Haushaltstruktur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gepaßt. Hierzu werden, beginnend ab der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mit dem Teilhaushalt 1990, aus dem Staatshaushalt insbesondere die folgenden Bereiche ausgegliedert:

- der Sozialbereich, soweit 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anz oder überwiegend beitrags- oder umlagenfinanziert ist,
- die Wirtschaftsunternehmen durch Umwandlung in rechtlich und wirtschaftlich selbständige Unternehmen,
- die Verkehrsbetriebe unter rechtlicher Verselbständigung,
- die Führung der Deutschen Reichsbahn und der Deutschen Post als Sondervermögen.

Die öffentlichen Wohnungsbaukredite werden substanzgerecht den Einzelobjekten zugeordnet.

(3) Die Gebietskörperschaf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ternehmen bei Aufstellung und Vollzug der Haushalte alle Anstrengungen zur Defizitbegrenzung. Dazu gehören bei den Ausgaben:

- der Abbau von Haushaltssubventionen, insbesondere kurzfristig für Industriewaren, landwirtschaftliche Produkte und Nahrungsmittel, wobei für letztere autonome Preisstützungen entsprechend den Regelung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lässig sind, und schrittweis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llgemeinen Einkommensentwicklung in den Bereichen des Verkehrs, der Energien für private Haushalte und des Wohnungswesens,
- die nachhaltige Absenkung der Personalausgaben im öffentlichen Dienst,
- die Überprüfung aller Ausgaben einschließlich der ihnen zugrundeliegenden Rechtsvorschriften auf Notwendigkeit und Finanzierbarkeit,
- die Strukturverbesserung des Bildungswesens sowie vorbereitende Aufteilung nach föderativer Struktur (einschließlich Forschungsbereich).

Bei den Einnahmen erfordert die Defizitbegrenzung neben Maßnahmen des 2. Abschnitts dieses Kapitels die Anpassung beziehungsweise Einführung von Beiträgen und Gebühren für öffentliche Leistungen entsprechend den Struktur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4) Es wird eine Bestandsaufnahme des volkseigenen Vermögens vorgenommen. Das volkseigene Vermögen ist vorrangig für die Strukturanpassung der Wirtschaft und für die Sanierung des Staatshaushalt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nutzen.

Art 27 Kreditaufnahme und Schulden

(1) Die Kreditermächtigungen in den Haushalten der Gebietskörperscha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für 1990 auf 10 Milliarden Deutsche Mark und für 1991 auf 14 Milliarden Deutsche Mark begrenzt und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die Ebenen verteilt. Für das Treuhandvermögen wird zur Vorfinanzierung zu erwartender Erlöse aus seiner Verwertung ein Kreditermächtigungsrahmen für 1990 von 7 Milliarden Deutsche Mark und für 1991 von 10 Milliarden Deutsche Mark festgelegt.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ann bei grundlegend veränderten Bedingungen eine Überschreitung der Kreditobergrenzen zulassen.

(2) Die Aufnahme von Krediten und das Einräumen von Ausgleichsforderungen erfolgen im Einvernehmen zwischen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leiches gilt für die Übernahme von Bürgschaften, Garantien oder sonstigen Gewährleistungen sowie für die Summe der in den Haushalten auszubringenden Verpflichtungsermächtigungen.

(3) Nach dem Beitritt wird die aufgelaufene Verschuldung des Republikhaushalts in dem Umfang an das Treuhandvermögen übertragen, soweit sie durch die zu erwartenden künftigen Erlöse aus der Verwertung des Treuhandvermögens getilgt werden kann. Die danach verbleibende Verschuldung wird je zur Hälfte auf den Bund und die Länder, die sich auf de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eu gebildet haben, aufgeteilt. Von den Ländern und Gemeinden aufgenommene Kredite verbleiben bei diesen.

Art 28 Finanzaufweis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währ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weckgebundene Finanzaufweisungen zum Haushaltsausgleich für das 2. Halbjahr 1990 von 22 Milliarden Deutsche Mark und für 1991 von 35 Milliarden Deutsche Mark. Außerdem werden gemäß Artikel 25 zu Lasten des Bundeshaushalts als Anschubfinanzierung für die Rentenversicherung 750 Millionen Deutsche Mark für das 2. Halbjahr 1990 sowie für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2 Milliarden Deutsche Mark für das 2. Halbjahr 1990 und 3 Milliarden Deutsche Mark für 1991 gezahlt. Die Zahlungen erfolgen bedarfsgerecht.

(2) Die Vertragsparteien stimmen darin überein, daß die gemäß Artikel 18 des Abkommens vom 17. Dezember 1971 über den Transitverkehr von zivilen Personen und Güter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zu zahlende Transitaufschale mit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entfäll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hebt die

Vorschriften über die in diesem Abkommen sowie in dem Abkommen vom 31. Oktober 1979 über die Befreiung von Straßenfahrzeugen von Steuern und Gebühren geregelten Gebühren mit Wirkung für die beiden Vertragsparteien auf. In Abänderung der Vereinbarung vom 5. Dezember 1989 vereinbarten die Vertragsparteien, daß ab dem 1. Juli 1990 keine Einzahlungen in den Reise-Devisenfonds mehr geleistet werden. Über die Verwendung eines bei Einführung der Währungsunion noch vorhandenen Betrags der Gegenwertmittel aus dem Reise-Devisenfonds wird zwischen den Finanzministern der Vertragsparteien eine ergänzende Vereinbarung getroffen.

Art 29 Übergangsregelung im öffentlichen Dienst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währleistet unter Beachtung von Artikel 2 Absatz 1 Satz 1, daß in Tarifverträgen oder sonstigen Regelungen im Bereich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unter Beschränkung neuer dienstrechtlicher Vorschriften auf Übergangsregelungen die allgemeinen wirtschaftlichen und finanziellen Verhältniss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ie Erfordernisse der Konsolidierung des Haushalts beachtet werden. Das 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findet sinngemäß Anwendung.

2. Abschnitt Finanzen

Art 30 Zölle und besondere Verbrauchsteuern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übernimmt schrittweise im Einklang mit dem Grundsatz in Artikel 11 Absatz 3 das Zollrech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einschließlich des Gemeinsamen Zolltarifs sowie die besonderen Verbrauchsteuern nach Maßgabe der Anlage IV.

(2) Die Vertragsparteien sind sich einig, daß ihr Zollgebiet den Geltungsbereich dieses Vertrags umfaßt.

(3) Der Grenzausgleich zwischen den Erhebungsgebieten für Verbrauchsteuern beider Vertragsparteien, ausgenommen für Tabak, entfällt. Die Steuerhoheit bleibt unberührt. Der Ausgleich der Aufkommensverlagerungen wird durch besondere Vereinbarungen geregelt.

(4) Zwischen den Erhebungsgebieten wird der Versand unversteuerter verbrauchsteuerpflichtiger Waren nach Maßgabe der Bestimmungen zugelassen, die den Verkehr mit unversteuerten Waren innerhalb eines Erhebungsgebiets regeln.

(5) Die Steuerentlastung für auszuführende Waren wird erst beim Nachweis der Ausfuhr in andere Gebiete als die der beiden Erhebungsgebiete gewährt.

Art 31 Besitz- und Verkehrsteuern

(1)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regelt die Besitz- und Verkehrsteuern nach Maßgabe der Anlage IV.

(2) Für Zwecke der Umsatzsteuer besteht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keine Steuergrenze; ein umsatzsteuerlicher Grenzausgleich erfolgt nicht. Die Steuerhoheit bleibt unberührt. Das Recht zum Vorsteuerabzug erstreckt sich auch auf die Steuer für Umsätze, die bei der anderen Vertragspartei der Umsatzsteuer unterliegen. Der Ausgleich der sich hieraus ergebenden Aufkommensminderung wird durch besondere Vereinbarung geregelt.

(3) Bei unbeschränkter Vermögensteuerpflicht im Gebiet einer Vertragspartei steht dieser Vertragspartei das ausschließliche Besteuerungsrecht zu; bei unbeschränkter Steuerpflicht im Gebiet beider Vertragsparteien gilt dies für die Vertragspartei, zu der der Steuerpflichtige die engeren persönlichen und wirtschaftlichen Beziehungen hat (Mittelpunkt der Lebensinteressen) oder in deren Gebiet er als nichtnatürliche Person die tatsächliche Geschäftsleitung hat. Auf das Gebiet der anderen Vertragspartei

entfallendes Vermögen ist nach den dort für Inlandsvermögen geltenden Vorschriften zu bewerten.

(4) Bei unbeschränkter Erbschaftsteuer- oder Schenkungsteuerpflicht im Gebiet einer Vertragspartei steht dieser Vertragspartei für Erwerbe, für die die Steuer nach dem 31. Dezember 1990 entsteht, das ausschließliche Besteuerungsrecht zu; bei unbeschränkter Steuerpflicht im Gebiet beider Vertragsparteien gilt dies für die Vertragspartei, zu der der Erblasser oder Schenker im Zeitpunkt der Entstehung der Steuerschuld die engeren persönlichen und wirtschaftlichen Beziehungen hatte (Mittelpunkt der Lebensinteressen) oder in deren Gebiet er als nichtnatürliche Person die tatsächliche Geschäftsleitung hatte. Für die Bewertung gilt Absatz 3 Satz 2 entsprechend.

(5) Für Erwerbe von Todes wegen, für die die Steuer nach dem 30. Juni 1990 und vor dem 1. Januar 1991 entsteht, gilt Absatz 4 entsprechend. Erwerbe von Todes wegen von Bürgern der Vertragsparteien, die nach dem 8. November 1989 im Gebiet der anderen Vertragspartei einen Wohnsitz begründet oder dort erstmals ihren gewöhnlichen Aufenthalt hatten und Wohnsitz oder gewöhnlichen Aufenthalt dort noch im Zeitpunkt des Todes hatten, dürfen dort zu keiner höheren Erbschaftsteuer herangezogen werden, als sie sich bei unbeschränkter Steuerpflicht im Gebiet der erstgenannten Vertragspartei ergäbe.

(6) Mitteilungs- und Anzeigepflichten, die sich aus dem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recht der Vertragsparteien ergeben, gelten auch gegenüber den Finanzbehörden der jeweiligen anderen Vertragspartei.

Art 32 Informationsaustausch

(1) Die Vertragsparteien tauschen die Informationen aus, die zur Durchführung ihres Abgaben- und Monopolrechts erforderlich sind. Zuständig für den Informationsaustausch sind die Finanzminister der Vertragsparteien und die von ihnen ermächtigten Behörden. Alle Informationen, die eine Vertragspartei erhalten hat, sind ebenso geheim zu halten wie die aufgrund ihres innerstaatlichen Rechts beschafften Informationen und dürfen nur den Personen oder Behörden (einschließlich der Gerichte und der Verwaltungsbehörden) zugänglich gemacht werden, die mit der Festsetzung oder Erhebung, der Vollstreckung oder Strafverfolgung oder mit der Entscheidung von Rechtsmitteln hinsichtlich der unter diesen Abschnitt fallenden Abgaben und Monopole befaßt sind. Diese Personen oder Behörden dürfen die Informationen nur für diese Zwecke verwenden. Sie dürfen die Informationen in einem öffentlichen Gerichtsverfahren oder in einer Gerichtsentscheidung offenlegen.

(2) Absatz 1 verpflichtet eine Vertragspartei nicht,

- Verwaltungsmaßnahmen durchzuführen, die von den Gesetzen und der Verwaltungspraxis dieser oder der anderen Vertragspartei abweichen,
- Informationen zu erteilen, die nach den Gesetzen oder im üblichen Verwaltungsverfahren dieser oder der anderen Vertragspartei nicht beschafft werden können,
- Informationen zu erteilen, die ein Handels-, Industrie-, Gewerbe- oder Berufsgeheimnis oder ein Geschäftsverfahren preisgeben würden oder deren Erteilung der öffentlichen Ordnung widerspräche.

Art 33 Konsultationsverfahren

(1) Die Vertragsparteien werden sich bemühen, bei den Besitz- und Verkehrsteuern eine Doppelbesteuerung durch Verständigung über eine sachgerechte Abgrenzung der Besteuerungsgrundlagen zu vermeiden. Sie werden sich weiter bemühen, Schwierigkeiten oder Zweifel, die sich bei der Auslegung oder Anwendung ihres Rechts der unter diesen Abschnitt fallenden Abgaben und Monopole im Verhältnis zueinander ergeben, im gegenseitigen Einvernehmen zu beseitigen.

(2) Zur Herbeiführung einer Einigung im Sinne des vorstehenden Absatzes können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mittelbar miteinander verkehren.

werden nicht mehr angewendet.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am Rechtsverkehr Beteiligten finden ihre Schranken in den guten Sitten, dem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und dem Schutz des wirtschaftlich schwächeren Vertragsteils vor unangemessener Benachteiligung.

3. Genehmigungsvorbehalte sollen nur aus zwingenden Gründen des allgemeinen Wohls bestehen. Ihre Voraussetzungen sind eindeutig zu bestimmen.

II. Wirtschaftsunion

1. Wirtschaftliche Leistungen sollen vorrangig privatwirtschaftlich und im Wettbewerb erbracht werden.
2. Die Vertragsfreiheit wird gewährleistet. In die Freiheit d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darf nur so wenig wie möglich eingegriffen werden.
3. Unternehmerische Entscheidungen sind frei von Planvorgaben (z.B. im Hinblick auf Produktion, Bezüge, Lieferungen, Investitionen, Arbeitsverhältnisse, Preise und Gewinnverwendung).
4. Private Unternehmen und freie Berufe dürfen nicht schlechter behandelt werden als staatliche und genossenschaftliche Betriebe.
5. Die Preisbildung ist frei, sofern nicht aus zwingenden gesamtwirtschaftlichen Gründen Preise staatlich festgesetzt werden.
6. Die Freiheit des Erwerbs, der Verfügung und der Nutzung von Grund und Boden und sonstiger Produktionsmittel wird für wirtschaftliche Tätigkeit gewährleistet.
7. Unternehmen im unmittelbaren oder mittelbaren Staatseigentum werden nach den Grundsätzen der Wirtschaftlichkeit geführt. Sie sind so rasch wie möglich wettbewerbsfähig zu strukturieren und soweit wie möglich in Privateigentum zu überführen. Dabei sollen insbesondere kleineren und mittleren Unternehmen Chancen eröffnet werden.
8.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werden die ordnungspolitischen und organisatorischen Grundsätze des Poststruktur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chrittweise verwirklicht.

III. Sozialunion

1. Jedermann hat das Recht,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ereinigungen zu bilden, bestehenden Vereinigungen beizutreten, aus solchen Vereinigungen auszutreten und ihnen fernzubleiben. Ferner wird das Recht gewährleistet, sich in den Koalitionen zu betätigen. Alle Abreden, die diese Rechte einschränken, sind unwirksam. Gewerkschaften und Arbeitgeberverbände sind in ihrer Bildung, ihrer Existenz, ihrer organisatorischen Autonomie und ihrer koalitionsgemäßen Betätigung geschützt.
2. Tariffähige Gewerkschaften und Arbeitgeberverbände müssen frei gebildet, gegnerfrei, auf überbetrieblicher Grundlage organisiert und unabhängig sein sowie das geltende Tarifrecht als für sich verbindlich anerkennen; ferner müssen sie in der Lage sein, durch Ausüben von Druck auf den Tarifpartner zu einem Tarifabschluß zu kommen.
3. Löhne und sonstige Arbeitsbedingungen werden nicht vom Staat, sondern durch freie Vereinbarungen von Gewerkschaften, Arbeitgeberverbänden und Arbeitgebern festgelegt.
4. Rechtsvorschriften, die besondere Mitwirkungsrechte des Freien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von Betriebsgewerkschaftsorganisationen und betrieblichen Gewerkschaftsleitungen vorsehen, werden nicht mehr angewendet.

B. Leitsätze für einzelne Rechtsgebiete

I. Rechtspflege

1. Vorschriften werden nicht mehr angewendet, soweit sie die Mitwirkung von Kollektiven, gesellschaftlichen Organen, der Gewerkschaften, der Betriebe, von gesellschaftlichen Anklägern und gesellschaftlichen Verteidigern an der Rechtspflege und deren Unterrichtung über Verfahren regeln; das Recht der Gewerkschaften zur Beratung und Prozeßvertretung in Arbeitsstreitigkeiten bleibt unberührt.
2. Vorschriften werden nicht mehr angewendet, soweit sie die Zusammenarbeit der Gerichte mit den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anderen Organen, die Berichtspflicht der Richter diesen gegenüber sowie die Gerichtskritik regeln.
3. Die Vorschriften über die Mitwirkung der Staatsanwaltschaft an der Rechtspflege werden nur noch angewendet, soweit sie ihre Mitwirkung im Strafverfahren und in Familienrechts-, Kindschafts- und Entmündigungssachen betreffen.
4. Die im Straf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ie sozialistische Gesetzmäßigkeit sowie auf die sozialistische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bezogenen Grundsätze sowie Vorschriften, die der Verfestigung planwirtschaftlicher Strukturen dienen, einer künftigen Vereinigung beider deutschen Staaten entgegenstehen oder Grundsätzen eines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Rechtsstaats widersprechen, finden auf nach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begangene Taten keine Anwendung.
5. Soweit Vorschriften des Strafgesetzbuchs das sozialistische Eigentum betreffen, finden sie auf Taten, die nach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begangen werden, keine Anwendung; die das persönliche oder private Eigentum betreffenden Vorschriften finden nach dem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auch Anwendung auf das sonstige Eigentum oder Vermögen.
6. Soweit die in der Anlage II des Vertrags genannten Regelungen straf- oder bußgeldbewehrt sind und sich diese Bewehrungsvorschriften nicht in das Sanktionensyste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fügen,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iese Vorschriften ihrem Recht in möglichst weitgehender Angleichung an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passen.

II. Wirtschaftsrecht

1. Zum Zwecke der Besicherung der Kredite werd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leichwertige Rechte, insbesondere Grundpfandrechte, w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schaffen.
2.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n freien Kapitalmarkt geschaffen. Hierzu gehört insbesondere die Freigabe der Zinssätze und die Zulassung von handelbaren Wertpapieren (Aktien und Schuldverschreibungen).
3. Es werden die Voraussetzungen dafür geschaffen, daß Verwaltungsakte und sonstige Anordnungen der in Artikel 3 Satz 3 des Vertrags genannten Behörden gegenüber Personen mit Sitz oder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otfalls auch mit Zwangsmitteln, durchgesetzt werden können.
4. Das bestehende Versicherungsmonopol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abgeschafft, die Prämienkontrolle in den Versicherungszweigen, in denen die Tarife nicht zum Geschäftsplan gehören, wird beseitigt und die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und Anordnungen über die Allgemeinen Bedingungen für Versicherungen werden aufgehoben.
5. Bestehende Hemmnisse im Zahlungsverkeh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beseitigt; seine privatrechtliche Ausgestaltung wird gefördert.
6. Der Außenwirtschaftsverkehr ist grundsätzlich frei. Beschränkungen sind nur aus zwingenden gesamtwirtschaftlichen Gründen sowie aufgrund von zwischenstaatlichen Vereinbarungen zulässig.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das Außenhandelsmonopol aufheben.

7. Zum Zwecke der Gewinnung vergleichbarer Grundlagen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hre Statistiken an di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passen und in Abstimmung mit dem Statistischen Bundesamt oder der Deutschen Bundesbank Informationen nach den Maßstäben der Bundesstatistik aus folgenden Bereichen bereitstellen: Arbeitsmarkt, Preise, Produktion, Umsätze, Außenwirtschaft und Einzelhandel.

III. Baurech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zur Planungs- und Investitionssicherheit für bauliche Vorhaben baldmöglichst Rechtsgrundlagen schaffen, die dem Baugesetzbuch und dem Raumordnungs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echen.

IV. Arbeits- und Sozialrecht

1. Arbeitgeb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önnen mit Arbeitnehmern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vorübergehe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chäftigt werden, die Anwendung bundesdeutschen Arbeitsrechts vereinbaren.
2. Bei vorübergehenden Beschäftigungen von Arbeitskräften werden Befreiungen von der sich aus einer Beschäftigung ergebenden Versicherungspflicht in der Sozialversicherung ermöglicht, wenn eine Versicherung unabhängig von dieser Beschäftigung besteht.
3. Die 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Sicherheit und den Gesundheitsschutz der Arbeitnehmer werden innerhalb einer angemessenen Übergangszeit an da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 Arbeitsschutzrecht angepaßt.
4.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bei einer Änderung der gesetzlichen Mindestkündigungsfristen für Arbeitsverhältnisse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ür Arbeiter und Angestellte jeweils geltenden gesetzlichen Mindestkündigungsfristen nicht überschreiten.
5.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für das Recht zur fristlosen Kündigung von Arbeitsverhältnissen aus wichtigem Grund eine gesetzliche Regelung schaffen, die den §§ 626, 628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entspricht.

Anlagenverzeichnis

- Anlage I: Bestimmungen über die Währungsunion und über die Währungsumstellung
- Anlage II: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Kraft zu setzende Rechtsvorschriften
- Anlage III: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zuhebende oder zu ändernde Rechtsvorschriften
- Anlage IV: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eu zu erlassende Rechtsvorschriften
- Anlage V: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ändernde Rechtsvorschriften
- Anlage VI: Regelungen,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weiteren Verlauf anzustreben sind
- Anlage VII: Grundsätze für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zur Durchführung des Vertrags
- Anlage VIII: Allgemeine Verfahrensvorschriften für das Schiedsgericht
- Anlage IX: Möglichkeiten des Eigentumserwerbs privater Investoren an Grund und Boden sowie an Produktionsmitteln zur Förderung gewerblicher arbeitsplatzschaffender Investitionen

Anlage I Bestimmungen über die Währungsunion und über die Währungsumstellung

-

Anlage II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Kraft zu setzende Rechtsvorschriften

I. Allgemeines

1. Gemäß Artikel 3 Satz 2 des Vertrags setz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bis zum Zeitpunkt seines Inkrafttretens die nachfolgend aufgeführten Gesetze oder Teile von Geset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ihrer geltenden Fassung in Kraft und erläßt die erforderlichen Übergangsvorschriften. Die Inkraftsetzung der Gesetze oder Teile von Gesetzen gemäß Absatz 1 erfaßt auch die zu ihrer Durchführung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sowie die Regelungen und Anordnungen der Deutschen Bundesbank,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Kreditwesen und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Soweit diese Gesetze und Rechtsverordnungen auf andere Rechtsvorschriften verweisen, ist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festzulegen, welche vergleichbaren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 deren Stelle treten oder ob die in Bezug genommenen 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wendung finden.
2. Nach Inkrafttreten des Vertrags gelten Änderungen der nachfolgend aufgeführten Gesetze oder Teile der Gesetz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auch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se Geltung erstreckt sich auch auf Änderungen der aufgrund dieser Gesetze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sowie auf Änderungen der Regelungen und Anordnungen der Deutschen Bundesbank,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Kreditwesen und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bei der Vorbereitung von Änderungen zu Gesetzen und Rechtsverordnungen im Sinne dieser Anlage unterrichten und ihre Stellungnahme einhol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Änderungen der Gesetze und Rechtsverordnungen, sonstiger Regelungen und Anordnungen in geeigneter Form bekanntmachen.
3. An die Stelle von Behörden oder sonstigen Stel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in den nachfolgend aufgeführten Gesetzen oder den dazu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nannt sind, treten, soweit in dieser Anlage nichts anderes festgelegt ist, die entsprechenden Behörden oder sonstigen Stell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rtikel 3 Satz 3 des Vertrags bleibt unberührt.

II. Währungsunion

1.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7620-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32 des Gesetzes vom 24. April 1986 (BGBl. I S. 560).
2.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1. Juli 1985 (BGBl. I S. 1472),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4 des Gesetzes vom 22. Dezember 1989 (BGBl. I S. 2408) mit folgender Maßgabe:
Solange nicht einem Gerich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in § 28 Abs. 2, § 46 Abs. 2 und § 46a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genannten Aufgaben durch Gesetz oder Verordnung übertragen worden sind, übernimmt das Amtsgericht Charlottenburg diese Aufgaben. § 46b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gilt für Kreditinstitute mit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it der Maßgabe, daß an die Stelle des Konkursverfahrens das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vom 18. Dezember 1975 (GBl. 1976 I S. 5) tritt und daß die Gesamtvollstreckung nur auf Antrag des Bundesaufsichtsamtes eingeleitet werden kann.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entscheidet im ersten und letzten Rechtszug über Klagen gegen Entscheidungen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Kreditwesen nach

dem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oder anderen Gesetzen oder wegen Untätigkeit des Bundesaufsichtsamtes, wenn der Kläger seinen Sitz oder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3. Hypothekengesetz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7628-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8. Juni 1988 (BGBl. I S. 710).
4. Gesetz über die Pfandbriefe und verwandten Schuldverschreibungen öffentlich-rechtlicher Kreditanstalten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35-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3 des Gesetzes vom 24. April 1986 (BGBl. I S. 560).
5. Gesetz über Bausparkassen vom 16. November 1972 (BGBl. I S. 209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 Abs. 22 des Gesetzes vom 29. März 1983 (BGBl. I S. 377).
6. Gesetz über Kapitalanlagegesellschaften (KAGG)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4. Januar 1970 (BGBl. I S. 12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22. Februar 1990 (BGBl. I S. 266).
7. Depotgesetz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30-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17. Juli 1985 (BGBl. I S. 1507).
8.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3. Oktober 1983 (BGBl. I S. 1261),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6 des Gesetzes vom 19. Dezember 1986 (BGBl. I S. 2595), mit folgender Maßgabe:
 - 1) Nach Anhörung des Ministers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 a) Genehmigungen, die die Aufnahme des Versicherungsgeschäft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möglichen, und
 - b) versicherungsaufsichtliche Genehmigungen für Versicherungsunternehmen mit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teilt. Hierbei ist darauf zu achten, daß in dem Verwaltungsverfahren den Belangen und den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chnung getragen wird.
 - 2) Über Anfechtungsklagen gegen Entscheidungen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oder Klagen wegen Untätigkeit des Bundesaufsichtsamtes entscheidet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im ersten und letzten Rechtszug.

III. Wirtschaftsunion

1.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0. Februar 1990 (BGBl. I S. 235) mit der Maßgabe, daß an die Stelle der §§ 24 bis 24c ein präventives vereinfachtes Untersagungsverfahren tritt.
2. Atom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Juli 1985 (BGBl. I S. 1565),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4. März 1990 (BGBl. I S. 478) mit der Maßgabe, daß i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s Vertrags bestehende atomrechtliche und strahlenschutzrechtliche Genehmigungen, Erlaubnisse und Zulassungen für Kernkraftwerke längstens fünf Jahre und für sonstige Anlagen und Tätigkeiten längstens 10 Jahre fortgelten und insoweit die Überwachungsvorschriften des Atomgesetzes über Auflagen, Widerruf und Aufsicht sowie über wesentliche Veränderungen Anwendung find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verpflichtet sich, das Nähere im Einvernehmen mit den zuständigen Stel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regeln.
3. Erstes bis Drittes Buch des Handelsgesetzbuches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00-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3. Oktober 1989 (BGBl. I S. 1910) sowie §§ 705 bis 740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00-2,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8. Dezember 1989 (BGBl. I S. 2261).

4.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23-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5. Mai 1986 (BGBl. I S. 721).
5. Aktiengesetz vom 6. September 1965 (BGBl. I S. 1089),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0. Dezember 1988 (BGBl. I S. 2312).
6.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25-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5. Juli 1988 (BGBl. I S. 1093).
7. Gesetz über die Kapitalerhöhung aus Gesellschaftsmitteln und über die Verschmelzung vo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20-2,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0 Abs. 9 des Gesetzes vom 19. Dezember 1985 (BGBl. I S. 2355).
8. Umwandlun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6. November 1969 (BGBl. I S. 2081),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9. Dezember 1985 (BGBl. I S. 2355).
9. AGB-Gesetz vom 9. Dezember 1976 (BGBl. I S. 331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 des Gesetzes vom 20. Dezember 1989 (BGBl. I S. 2486).
10. Gesetz über den Widerruf von Haustürgeschäften und ähnlichen Geschäften vom 16. Januar 1986 (BGBl. I S. 122).
11. Gesetz betreffend die Abzahlungsgeschäfte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02-2,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9 Nr. 3 des Gesetzes vom 3. Dezember 1976 (BGBl. I S. 3281).

IV. Sozialunion

1. Gesetz ü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äten und Vorstä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zeugenden Industrie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801-2,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9. Dezember 1985 (BGBl. I S. 2355).
2. Gesetz zur Ergänzung des Gesetzes ü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äten und Vorstä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zeugenden Industrie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801-3,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0. Dezember 1988 (BGBl. I S. 2312).
3. Mitbestimmungsgesetz vom 4. Mai 1976 (BGBl. I S. 1153).
4. §§ 76, 77, 77a, 81, 85, 87 des Betriebsverfassungsgesetzes 1952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801-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1. Mai 1979 (BGBl. I S. 545).
5. Betriebsverfassun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3. Dezember 1988 (BGBl. 1989 I S. 1, 902).
6. Tarifvertra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5. August 1969 (BGBl. I S. 1323), geändert durch Artikel II § 1 des Gesetzes vom 29. Oktober 1974 (BGBl. I S. 2879).
7. Kündigungsschutz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5. August 1969 (BGBl. I S. 1317),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e vom 13. Juli 1988 (BGBl. I S. 1034 und 1037).

Anlage III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zuhebende oder zu ändernde Rechtsvorschrift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gewährleistet, daß nachfolgende Rechtsvorschriften nach Maßgabe dieser Anlage bis zum Inkrafttreten des Vertrags aufgehoben oder geändert werden.

I. Währungsunion

1. Das Gesetz über 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9. Dezember 1974 (GBl. I Nr. 62 S. 580), geändert durch das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6. März 1990 (GBl. I Nr. 16 S. 125) wird mit dem Ziel der Auflösung der Staatsbank als Notenbank einschließlich ihrer Kompetenz bei der Bankaufsicht geändert.
2. Das Devisengesetz vom 19. Dezember 1973 (GBl. I Nr. 58 S. 574) in der Fassung des Gesetzes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Devisengesetzes vom 28. Juni 1979 (GBl. I Nr. 17 S. 147) und der Anlage 5 des 5. Strafrechtsänderungsgesetzes vom 14. Dezember 1988 (GBl. I Nr. 29 S. 335) wird aufgehoben.
3. Die Anordnung über Altguthaben-Ablösungs-Anleihe vom 23. September 1948 (ZVOBl. Nr. 46 S. 475) und die dazu erlassenen Durchführungsverordnungen werden mit dem Ziel geändert, die ruhenden Ansprüche an der Altguthaben-Ablösungs-Anleihe einschließlich der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eit 1958 eingestellten Zinszahlungen für die Inhaber der Anleihe in Deutscher Mark verfügbar zu machen.
4.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die der Währungsunion entgegenstehenden Gesetze und andere Rechtsvorschriften auf dem Gebiet des Kredits und der Einlagen einschließlich ihrer Verzinsung, des baren und bargeldlosen Zahlungsverkehrs sowie der Berechnung von Gebühren aufgehoben oder entsprechend geändert. Dabei wird dem Gläubiger das Recht eingeräumt, den Zinssatz für Kredite durch einseitige Erklärung gegenüber dem Schuldner in marktüblicher Höhe festzusetzen. Dem Schuldner wird ein Kündigungsrecht eingeräumt.

II. Wirtschaftsunion

1. Das Gesetz über den Außenhandel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9. Januar 1958 (GBl. I Nr. 6 S. 69) sowie die darauf beruhenden Verordnungen werden aufgehoben.
2. Die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5. Januar 1990 (GBl. I Nr. 4 S. 16) wird aufgehoben.
3. Das Gesetz über die Übertragung volkseigener landwirtschaftlicher Nutzflächen in das Eigentum von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vom 6. März 1990 (GBl. I Nr. 17 S. 135) wird aufgehoben.
4. § 18 des Gesetzes über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en - LPG-Gesetz - vom 2. Juli 1982 (GBl. I Nr. 25 S. 443) wird aufgehoben.
5. § 9 der Verordnung zur Umwandlung von volkseigenen Kombinat, Betrieben, Einrichtungen und Kapitalgesellschaften vom 1. März 1990 (GBl. I Nr. 14 S. 107) wird aufgehoben.
6. Die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vom 18. Dezember 1975 (GBl. I 1976 Nr. 1 S. 5) wird um Vorschriften für den Konkurs von Unternehmen ergänzt.
7. Die Vorschriften der Verordnung über die Energie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Energieverordnung (EnVO) - vom 1. Juni 1988 (GBl. I Nr. 10 S. 89) werden, soweit sie nicht mit dem Vertrag übereinstimmen, aufgehoben oder geändert.
8. Das Zivil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9. Juni 1975 (GBl. I Nr. 27 S. 465) wird wie folgt geändert:
 - a) Die Präambel wird gestrichen.
 - b) § 6 Abs. 1, §§ 17 und 20, § 22 Abs. 1, § 46, § 68 Abs. 2 Satz 2, § 69, § 258 sowie § 452 Abs. 3 werden aufgehoben.
 - c) § 23 Abs. 2 wird wie folgt geändert:

- aa) Die Worte "überwiegend auf persönlicher Arbeit beruhende" werden gestrichen.
 - bb) Es wird folgender Satz angefügt:
"Das gleiche gilt für sonstiges Privateigentum."
 - d) § 62 Abs. 2 erhält folgende Fassung:
"Der Preis bestimmt sich nach den von den Partnern getroffenen Vereinbarungen. Rechtsvorschriften über staatliche Preisfestsetzungen bleiben unberührt."
 - e) In § 448 Abs. 1 werden die Worte "der Kreditinstitute, volkseigener Betriebe, staatlicher Organe und Einrichtungen sowie sozialistischer Genossenschaften" gestrichen.
 - f) In § 453 Abs. 1 Satz 2 werden die Worte "und der staatlichen Genehmigung, soweit es sich nicht um eine Hypothek zugunsten eines Kreditinstitutes handelt" gestrichen.
 - g) In § 454 Abs. 3 Satz 2 werden die Worte "und der staatlichen Genehmigung" gestrichen. Nach § 454 wird folgende neue Vorschrift eingefügt:
"§ 454a

(1) Eine Hypothek kann in der Weise bestellt werden, daß nur der Höchstbetrag, bis zu dem das Grundstück haften soll, bestimmt, im übrigen die Feststellung der Forderung vorbehalten wird. Der Höchstbetrag muß in das Grundbuch eingetragen werden.
(2) Ist die Forderung verzinslich, so werden die Zinsen in den Höchstbetrag eingerechnet.
(3) Die Forderung kann nach den für die Übertragung von Forderungen geltenden allgemeinen Vorschriften übertragen werden. Wird sie nach diesen Vorschriften übertragen, so ist der Übergang der Hypothek ausgeschlossen."
 - h) § 456 Abs. 3 und § 458 werden aufgehoben. Hierzu wird in den Übergangsvorschriften zur Änderung des ZGB vorgesehen:
"§ 456 Abs. 3 und § 458 sind bei Aufbauhypotheken, die vor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entstanden sind, weiter anzuwenden."
9. Das Wechselgesetz wird an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 Fassung (Wechselgesetz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33-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3 des Gesetzes vom 17. Juli 1985 - BGBl. I S. 1507 -) angepaßt.
10. Das Scheckgesetz wird an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 Fassung (Scheckgesetz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32-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4 des Gesetzes vom 17. Juli 1985 - BGBl. I S. 1507 -) angepaßt.
11. Das Gesetz über internationale Wirtschaftsverträge - GIW - vom 5. Februar 1976 (GBl. I Nr. 5 S. 61) wird wie folgt geändert:
- a) Die Überschrift "Gesetz über internationale Wirtschaftsverträge - GIW -" wird wie folgt ersetzt:
"Gesetz über Wirtschaftsverträge - GW -"
 - b) § 1 wird wie folgt geändert:
 - aa) Abs. 1 wird wie folgt gefaßt:
"(1) Dieses Gesetz wird auf Wirtschaftsverträge zwischen inländischen Kaufleuten, Unternehmen, Betrieben und den diesen Gleichgestellten Wirtschaftssubjekten angewendet. Es ist nicht anzuwenden, wenn ein Partner ein Handwerksbetrieb ist."
 - bb) Der bisherige Abs. 1 wird Abs. 2.
 - cc) Der bisherige Abs. 2 wird Abs. 3.
 - c) In § 2 Abs. 2 wird das Wort "internationalen" gestrichen.

- d) In § 3 Abs. 3 wird das Wort "internationale" gestrichen.
 - e) §§ 200 bis 217 und § 331 werden aufgehoben.
12. Das Gesetz über das Vertragssystem in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 Vertragsgesetz - vom 25. März 1982 (GBl. I Nr. 14 S. 293) nebst Durchführungsverordnungen wird aufgehoben.
13. Die Verordnung über die staatliche Dokumentation der Grundstücke und Grundstücksrech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Grundstücksdokumentationsordnung - vom 6. November 1975 (GBl. I Nr. 43 S. 697) wird wie folgt geändert:
§ 8 Abs. 1 Satz 3 wird aufgehoben.
14. Die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 Grundstücksverkehrsverordnung - vom 15. Dezember 1977 (GBl. I 1978 Nr. 5 S. 73) wird wie folgt geändert:
a) § 2 Abs. 1 Buchstaben c und h werden aufgehoben.
b) § 3 Abs. 5 wird aufgehoben.
15. Das Gesetz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privater Unternehmen und über Unternehmensbeteiligungen vom 7. März 1990 (GBl. I Nr. 17 S. 141) wird wie folgt geändert:
a) § 4 Abs. 1 Satz 3 erhält folgende Fassung:
"Volkseigener Boden kann zu Eigentum oder lediglich zur Nutzung eingebracht werden."
b) § 5 Abs. 1 Satz 1 und 2 erhalten folgende Fassung:
"Zum Zwecke der Gründung oder der Erweiterung eines privaten Unternehmens kann der Kauf von Geschäftsanteilen oder Aktien bzw. Grundstücken, Gebäuden, baulichen oder anderen Anlagen staatlicher Unternehmen erfolgen. Volkseigener Boden kann zu Eigentum oder lediglich zur Nutzung überlassen werden."
c) § 10 wird aufgehoben.
16. Die Verordnung über Bodennutzungsgebühr vom 26. Februar 1981 (GBl. I Nr. 10 S. 116) wird mit dem Ziel geändert, die Freiheit des Erwerbs, der Verfügung und der Nutzung von Grund und Boden für wirtschaftliche Tätigkeit nicht einzuschränken.
17. Die Verordnung über Rechnungsführung und Statistik vom 11. Juli 1985 (GBl. I Nr. 23 S. 261) sowie alle hierzu ergangenen weiteren Verordnungen werden aufgehoben.
18. Die Verordnung über die Flaggenführung und Eigentumsrechte an Schiffen und das Schiffsregister - Schiffsregisterverordnung - vom 27. Mai 1976 (GBl. I Nr. 21 S. 285) wird wie folgt geändert:
a) In § 11 Abs. 2 werden die Worte "und der Genehmigung durch das zuständige Staatsorga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strichen.
b) § 13 Abs. 2 wird aufgehoben.
c) Nach § 13 wird folgende neue Vorschrift eingefügt:
"§ 13a

(1) Eine Schiffshypothek kann in der Weise bestellt werden, daß nur der Höchstbetrag, bis zu dem das Schiff haften soll, bestimmt, im übrigen die Feststellung der Forderung vorbehalten wird. Der Höchstbetrag muß in das Schiffsregister eingetragen werden.
(2) Ist die Forderung verzinslich, so werden die Zinsen in den Höchstbetrag eingerechnet.
(3) Die Forderung kann nach den für die Übertragung von Forderungen geltenden allgemeinen Vorschriften übertragen werden. Wird sie nach

diesen Vorschriften übertragen, so ist der Übergang der Schiffshypothek ausgeschlossen."

19. Änderungen und Ergänzungen des Strafgesetzbuches

Das Straf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StGB - vom 12. Januar 1968 in der Neufassung vom 14. Dezember 1988 (GBl. I 1989 Nr. 3 S. 33) wird geändert und ergänzt oder in seiner Anwendung ausgesetzt:

1. Die Präambel und das 1. Kapitel des Allgemeinen Teils werden aufgehoben.
2. Die §§ 32, 34, 46, 47, 48, 50, 51, 52, 69 Absatz 3, 70 Absatz 2, 3. Anstrich, die Präambel zum 1. Kapitel des Besonderen Teils sowie die §§ 90, 99, 105, 106, 108, 213, 219, 249 werden aufgehoben.
3. In § 17 Absatz 1 werden die Worte "oder gegen die sozialistische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sowie die Worte "handelt im Interesse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nd ihrer Gesetzlichkeit und" gestrichen.
4. In § 18 Absatz 1 werden die Worte "oder der sozialistischen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gestrichen.
5. In § 35 Absatz 2 Satz 1 werden die Worte "auf Antrag des für die erzieherische Einwirkung verantwortlichen Leiters (§ 32), eines Kollektivs, dem der Verurteilte angehört, oder eines Bürgen" gestrichen.
6. In § 110 Ziffer 1 werden die Worte "die sozialistische Staats- oder Gesellschaftsordnung," gestrichen.
7. Bis zum Inkrafttreten einer Neuregelung werden die §§ 33 Absatz 4 Ziffer 7, 96, 100, 101, 102, 103, 104 und 107 nicht angewendet.
8. Bis zum Inkrafttreten ihrer Neuregelung werden auf Taten, die nach dem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begangen werden, die §§ 57, 165, 167 bis 171, 214 nicht, die §§ 166, 173 in folgender Fassung angewendet:

"§ 166

Datenveränderung und Computersabotage

(1) Wer rechtswidrig Daten löscht, unterdrückt, unbrauchbar macht oder verände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Verurteilung auf Bewährung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e Datenverarbeitung, die für einen fremden Betrieb, ein fremdes Unternehmen oder eine Behörde von wesentlicher Bedeutung ist, dadurch stört, daß er

1. eine Tat nach Absatz 1 begeht oder
2. eine Datenverarbeitungsanlage oder einen Datenträger zerstört, beschädigt, unbrauchbar macht, beseitigt oder verändert.

(3) Der Versuch ist strafbar.

(4) Die Verfolgung der Tat nach Absatz 1, Absatz 3 in Verbindung mit Absatz 1 tritt auf Antrag des Geschädigten ein.

§ 173

Wucher

(1) Wer die Zwangslage, die Unerfahrenheit, den Mangel an Urteilsvermögen oder die erhebliche Willensschwäche eines anderen dadurch ausbeutet, daß er sich oder einem Dritten

1. für die Vermietung von Räumen zum Wohnen oder damit verbundene Nebenleistungen,
2. für die Gewährung eines Kredits,
3. für eine sonstige Leistung oder
4. für die Vermittlung einer der vorbezeichneten Leistungen

Vermögensvorteile versprechen oder gewähren läßt, die in einem auffälligen Mißverhältnis zu der Leistung oder deren Vermittlung stehen, wird mit

Geldstrafe, Verurteilung auf Bewährung oder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bestraft. Wirken mehrere Personen als Leistende, Vermittler oder in anderer Weise mit und ergibt sich dadurch ein auffälliges Mißverhältnis zwischen sämtlichen Vermögensvorteilen und sämtlichen Gegenleistungen, so gilt Satz 1 für jeden, der die Zwangslage oder sonstige Schwäche des anderen für sich oder einen Dritten zur Erzielung eines übermäßigen Vermögensvorteils ausnutzt.

(2) In besonders schweren Fällen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acht Jahren oder Verurteilung auf Bewährung. Ein besonders schwerer Fall liegt in der Regel vor, wenn der Täter

1. durch die Tat den anderen in wirtschaftliche Not bringt,
2. die Tat gewerbsmäßig begeht oder
3. sich durch Wechsel wucherische Vermögensvorteile versprechen läßt."

20. Das Gesetz über die Wiedereingliederung der aus dem Strafvollzug entlassenen Bürger in das gesellschaftliche Leben - Wiedereingliederungsgesetz - vom 7. April 1977 (GBl. I Nr. 10 S. 98) wird bis zum Inkrafttreten einer Neuregelung nicht angewendet.
21. Die die Rechtspflege betreffenden Gesetze werden mit folgender Zielsetzung geändert:
- a) Gerichtsverfassungsrecht
Stärkung der richterlichen Unabhängigkeit und des Grundsatzes der Gewaltenteilung, namentlich durch Beseitigung der Leitung, Beaufsichtigung und Beeinflussung der Rechtspflege sowie der Zusammenarbeit der Gerichte mit den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der Berichtspflicht der Richter diesen gegenüber und der Gerichtskritik;
 - b) Zivilprozeßrecht
 - aa) Erkenntnisverfahren
Beseitigung von Vorschriften, die die Privatautonomie beeinträchtigen; Geltung der Parteimaxime in vermögensrechtlichen Streitigkeiten; Beseitigung des Verfahrensziels der Erziehung der Gesellschaft;
 - bb) Vollstreckungsverfahren
Abbau marktwirtschaftlicher Hemmnisse; Reduzierung der Möglichkeiten staatlicher Einflußnahme; Beseitigung gerichtsfremder Einflüsse durch die Betriebe und Entlastung der Betriebe von betriebsfremden Aufgaben; Sicherung eines pfändungsfreien Arbeitseinkommens, das dem Schuldner einen den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n Betrag für ein menschenwürdiges Dasein beläßt;
 - c) Änderungen bei den gesellschaftlichen Gerichten
Beseitigung der Zuständigkeit für arbeitsrechtliche Streitigkeiten; Bildung etwaiger Schlichtungsstellen durch demokratisch legitimierte Gremien;
 - d) Registerbehörden, Grundbuch
Überprüfungsmöglichkeit der Entscheidungen der Registerbehörden und in Grundbuchangelegenheiten durch die Gerichte, soweit die Führung der Register nicht den ordentlichen Gerichten übertragen wird;
 - e) Staatsanwaltschaft
Beseitigung der allgemeinen Gesetzlichkeitsaufsicht; Beschränkung ihrer Mitwirkungsbefugnis auf Strafverfahren und Familienrechts-, Kindschafts- und Entmündigungssachen;
 - f) Strafverfahren
Beseitigung der Tätigkeit von gesellschaftlichen Anklägern und gesellschaftlichen Verteidigern; Verbesserung der Rechte der Beschuldigten, namentlich bessere Verankerung des Grundsatzes, sich nicht selbst belasten zu müssen;
 - g) Gerichtlicher Rechtsschutz in abgaben-, sozial- und sonstigen verwaltungsrechtlichen Angelegenheiten

Sicherung eines Mindestmaßes an Rechtsschutz einschließlich eines effektiven einstweiligen Rechtsschutzes, namentlich gegen alle Verwaltungsentscheidungen, durch die Unternehmen und Unternehmungen Beschränkungen und Lasten, insbesondere Steuern und andere Abgaben, auferlegt oder Gewährungen versagt werden, sowie gegen alle Verwaltungsentscheidungen auf den Gebieten des Sozialrechts, insbesondere des Sozialversicherungsrechts, des Rechts der Arbeitsförderung und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h) Rechtsberatung

Freier Zugang zum Beruf des Rechtsanwalts und gerichtliche Überprüfung der Zulassung und deren Entziehung; uneingeschränkte Beratungs- und Vertretungsbefugnis der Rechtsanwälte in allen Rechtsangelegenheiten; fü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 Rechtsanwälte im Grundsatz Befugnisse, die einem Rechtsanwal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stehen, zumindest im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 entsprechende Regelungen für Patentanwälte; Sicherung der Unabhängigkeit und Unparteilichkeit der Notariate.

III Sozialunion

1. Das Gesetz über die Rechte der Gewerkschaf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6. März 1990 (GBl. I Nr. 15 S. 110) wird aufgehoben.
2. Die Verordnung über die Aufgaben, Rechte und Pflichten der Arbeitsämter und der Betriebe zur Sicherung des Rechts auf Arbeit vom 8. März 1990 (GBl. I Nr. 18 S. 161) wird aufgehoben.
3. Die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staatlicher Unterstützung und betrieblicher Ausgleichszahlung an Bürger während der Zeit der Arbeitsvermittlung vom 8. Februar 1990 (GBl. I Nr. 7 S. 41) wird aufgehoben.
4. Der Beschluß des Staats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Tätigkeit der Konfliktkommissionen - Konfliktkommissionsordnung - vom 12. März 1982 (GBl. I Nr. 13 S. 274) wird aufgehoben, soweit das Verfahren für arbeitsrechtliche Streitigkeiten geregelt wird.
5. Der Beschluß des Minister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s Bundesvorstandes des Freien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zur Richtlinie über die Wahl, Aufgaben und Arbeitsweise der Beschwerdekommisionen der Sozialversicherung des Freien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vom 21. Februar 1978 (GBl. I Nr. 8 S. 109) wird aufgehoben.
6. Die Verordnung über die Wahl, Aufgaben und Arbeitsweise der Beschwerdekommision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bei der Staatlichen 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Beschwerdekommisionsordnung - vom 4. Mai 1979 (GBl. I Nr. 14 S. 106) wird aufgehoben.

Folgende Rechtsvorschriften werden, soweit sie mit dem Vertrag nicht vereinbar sind, geändert:

7. Arbeits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6. Juni 1977 (GBl. I Nr. 18 S. 185).
8.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und Berechnung von Renten der Sozialversicherung - Rentenverordnung - vom 23. November 1979 (GBl. I Nr. 43 S. 401), zuletzt geändert durch die 5. Rentenverordnung vom 25. Januar 1990 (GBl. I Nr. 5 S. 24).
9. Verordnung über die freiwillige Zusatzrentenversicherung der Sozialversicherung - FZR-VO - vom 17. November 1977 (GBl. I Nr. 35 S. 395), zuletzt geändert durch die 4. FZR-Verordnung vom 8. Juni 1989 (GBl. I Nr. 19 S. 232).
10. Verordnung zur Sozialpflicht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 SVO - vom 17. November 1977 (GBl. I Nr. 35 S. 373).

11. Verordnung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bei der Staatlichen 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9. Dezember 1977 (GBl. I 1978 Nr. 1 S. 1), in der Fassung der Zweiten Verordnung vom 7. Januar 1985 (GBl. I Nr. 2 S. 10).
12. Verordnung über die Sozialpflichtversicherung der in eigener Praxis tätigen Ärzte, Zahnärzte, Tierärzte und der freiberuflich tätigen Kultur- und Kunstschaaffenden vom 9. Dezember 1977 (Sonderdruck Nr. 942 des Gesetzblattes) in der Fassung der Zweiten Verordnung vom 7. Januar 1985 (GBl. I Nr. 2 S. 9).
13. Verordnung über Leistungen der Sozialfürsorge - Sozialfürsorgeverordnung - vom 23. November 1979 (GBl. I Nr. 43 S. 422), zuletzt geändert durch die 4. Sozialfürsorgeverordnung vom 8. März 1990 (GBl. I Nr. 18 S. 165), im Hinblick auf die spätere Überleitung in das in Artikel 24 des Vertrags vorgesehene Sozialhilfesystem.

Anlage IV Vo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eu zu erlassende Rechtsvorschrift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zur Durchführ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bis zum Inkrafttreten des Vertrags oder bis zu dem in dieser Anlage genannten anderen Zeitpunkt nach Maßgabe dieser Anlage die nachfolgenden Rechtsvorschriften erlassen:

I. Wirtschaftsunion

1. Gesetz über die Aufnahme einer gewerblichen Tätigkeit oder eines freien Berufs durch Personen ohne Wohnsitz,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1) Für natürliche und juristische Personen sowie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die weder ihren Wohnsitz noch ihren Sitz oder eine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ben, gilt der Grundsatz der Niederlassungsfreiheit. Ihnen kann die gewerbliche Tätigkeit oder die Ausübung eines freien Berufs nur unter den für Gebietsansässige zulässigen Voraussetzungen untersagt werden.
 - (2) 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lche die Ausübung einer gewerblichen Tätigkeit oder eines freien Berufs von einer besonderen Qualifikation abhängig machen, bleiben unberührt.
 - (3) Für die Aufnahme von Bankgeschäften oder Versicherungsgeschäf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 anstelle der Absätze 1 und 2 das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und da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2. Bei Aufhebung des Devisengesetzes und der dazu erlassenen Durchführungsbestimmungen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m Einvernehmen mit der Bundesregierung ein Gesetz und entsprechende Rechtsvorschriften zur Liberalisierung des Waren-, Dienstleistungs-, Kapital- und Zahlungsverkehrs mit dem Ausland in Kraft setzen und ihre Vorschriften an die Regelungen des Außenwirtschafts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gleichen.
3. Gesetz über die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Verabschiedung eines Gesetzes über die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beim Übergang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nebst Leitsätzen: Grundsatz der freien Preisbildung mit Ausnahmen, wo dies zur Durchsetzung wirtschaftspolitischer Zielsetzungen mit hohem volkswirtschaftlichem Gewicht nötig erscheint; Regeln für Preisfestsetzung mit Ankündigung von Leitsätzen für ihre Anwendung, zentral und in den Ländern; Regeln für die Überwachung festgesetzter Preise und für die Verhinderung mißbräuchlicher Praktiken bei freien Preisen.
4. Bestimmungen über Datenübermittlungen zwischen den Meldestell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n Meldebehörden im Geltungsbereich des Melderechtsrahmengesetzes (MRRG) auf der Grundlage von §§ 17 und 18 dieses Gesetzes und der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von regelmäßigen Datenübermittlungen zwischen Meldebehörden verschiedener Länder (Erste

Meldedaten-Übermittlungsverordnung des Bundes - 1. BMeldDÜV vom 18. Juli 1983 - BGBl. I S. 943).

5.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Rechtsvorschriften entsprechend dem Steuerberatungs- und Wirtschaftsprüfer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Wirkung spätestens ab 1. Januar 1991. Sie stellt sicher, daß mit Wirkung ab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Personen, Gesellschaften und Vereinigungen, die nach de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Tätigkeiten im Rahmen des Steuerberatungsgesetzes oder zur Tätigkeit des Wirtschaftsprüfers oder des vereidigten Buchprüfers befugt sind, im gleichen Umfang auch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hre Tätigkeit ausüben dürfen.

II. Sozialunio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folgende Rechtsvorschriften mit dem Ziel der Angleichung an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 ein Arbeitsförderungsgesetz;
2. ein Gesetz zur Sicherung der Eingliederung Schwerbehinderter in Arbeit, Beruf und Gesellschaft (Schwerbehindertengesetz);
3. ein Gesetz über die Entgeltfortzahlung im Krankheitsfall;
4. ein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5. ein Gesetz zur Angleichung der Bestandsrenten an das Nettorentenniveau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weitere rentenrechtliche Regelungen;
6. ein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as Verfahren der Schiedsstellen für Arbeitsrecht;
7. ein Gesetz über den Anspruch auf Sozialhilfe (Sozialhilfegesetz).

III. Staatshaushalt und Finanzen

1. Haushaltsrecht, Finanzkontrolle
 - a)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etzt eine Haushaltsordnung in Kraft, die die Regelungen der Bundeshaushalts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hält und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rstellt wird. Sie übernimmt gleichzeitig das Haushaltsgrundsätze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der Maßgabe, daß das Haushaltsausgleichsgebot, das Verbot von Nebenhaushalten (Einheit des Haushalts) und der Ist-Abschluß verbindlich gemacht werden.
 - b)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hrt eine unabhängige Finanzkontroll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ein. Sie erläßt hierzu ein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Rechnungshofes, der eine Organisation aufweist, die weitgehend der des Bundesrechnungshof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icht.
2. Recht der besonderen Verbrauchsteuer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Rechtsvorschriften entsprechend den Gesetzen und Verordn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die besonderen Verbrauchsteuern betreffend Bier, Branntwein, Kaffee und Tee, Leuchtmittel, Mineralöl, Zucker, Salz, Schaumwein und Tabak. Das gilt auch für das Landwirtschafts-Gasölverwendungsgesetz. Bei Erlass der Rechtsvorschriften kann vo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Einvernehmen mi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gewichen werden, soweit dies sachlich geboten ist. Wird das 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ändert, so gelten die Sätze 1 und 3 entsprechend.
3. Recht des Branntweinmonopols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Rechtsvorschriften entsprechend dem Gesetz und den Verordnungen über das Branntweinmonopol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bei kann im Einvernehmen mi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gewichen werden, soweit dies sachlich geboten ist. Wird das 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ändert, so gelten die Sätze 1 und 2 entsprechend. Die Vergabe regelmäßiger Brennrechte im Rahmen

des Branntweinmonopol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folgt in Übereinstimmung mi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Monopolverwalt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chließt sich der Markt- und Preispolitik der Bundesmonopolverwaltung für Branntwein an; Abweichungen bedürfen des Einvernehmens der Monopolverwaltungen.

4. Recht der Besitz- und Verkehrsteuer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Rechtsvorschriften entsprechend den Gesetzen und Verordn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Maßgabe von Satz 4. Dabei kann im Einvernehmen mit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gewichen werden, soweit dies sachlich geboten ist. Wird das 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ändert, so gelten die Sätze 1 und 2 entsprechend. Geregelt werden

das Umsatzsteuerrecht;
das Versicherungsteuerrecht einschließlich Feuerschutzsteuer;
das Wechselsteuerrecht;
das Steuerverfahrensrech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ihr Steuerstrafrecht sowie dessen strafverfahrensrechtliche Sonderregelungen in weitgehender Angleichung an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gestalten;

mit Wirkung ab 1. Januar 1991 unter Berücksichtigung der Nummer 5

das Einkommen- und Lohnsteuerrecht
das Körperschaftsteuerrecht;
das Gewerbesteuerrecht;
das Vermögensteuerrecht;
das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recht;
das Grundsteuerrecht;
das Bewertungsrecht;
das Grunderwerbsteuerrecht;
das Kraftfahrzeugsteuerrecht.

Bei der Regelung ist der besonderen Struktur der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Hinblick auf ihre Chancengleichheit Rechnung zu tragen.

5. Regelung bei der Einkommen- und Lohnsteuer sowie der Körperschaftsteuer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regelt durch Gesetz, daß mit Wirkung ab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 a)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n Regelungen über die steuerliche Gewinnermittlung in Kraft treten;
- b) die Steuer von den Lohneinkünften nach d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 1990 geltenden allgemeinen Monats- und Tageslohnsteuertabellen für die Steuerklasse I bemessen wird;
für jedes Kind wird in den Tabellen ein jährlicher Kinderfreibetrag von 1.512 Deutsche Mark berücksichtigt; weitere Ermäßigungen sowie ein Abzug von Aufwendungen, die über die in diesen Lohnsteuertabellen eingearbeiteten Frei- und Pauschbeträge hinausgehen, sind unzulässig; steuerfreie Lohnanteile werden nur noch in dem Umfang anerkannt, wie sie am 1. Mai 1990 tarifvertraglich vereinbart waren.

Unternehmen, die durch die Umwandlung volkseigener Kombinate, Betriebe und Einrichtungen entstanden sind, entrichten zur Wahrung einer vergleichbaren Belastung mit Unternehm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s zum 31. Dezember 1990 Körperschaftsteuer, Gewerbesteuer und Vermögensteuer nach den geltenden Steuergeset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 Fassung des Steueränderungsgesetzes vom 6. März 1990 unter Berücksichtigung von Buchstabe a.

6. Zollrech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in Angleichung an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den Zollvorschriften ein Zollgesetz und entsprechende Durchführungsbestimmungen in Kraft setzen. Die übrigen zollrechtlichen Vorschrif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einschließlich des Gemeinsamen Zolltarifs werden schrittweise eingeführt. Die Zollrechtsangleichung erfolgt im Einvernehmen m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7. Einführung einer Straßenbenutzungsgebühr für Lastkraftwag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läßt mit Wirkung ab 1. Januar 1991 Rechtsvorschriften entsprechend den 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die Erhebung einer Gebühr für die Benutzung von Autobahnen und Fernstraßen; mit dritten Staaten abgeschlossene völkerrechtliche Verträge bleiben unberührt.

Es wird vorgesehen, daß bei Entrichtung der Gebühr im Gebiet einer Vertragspartei im Gebiet der anderen Vertragspartei keine zusätzliche Gebühr zu entrichten ist.

IV. Datenschutz

Einführung von Datenschutzregelungen, die den Regelungen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echen. Sie sollen nach Möglichkeit mit Wirkung ab 1. Januar 1991 erlassen werden. Bis dahin wird bei der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nach den in der Anlage VII enthaltenen Grundsätzen verfahren.

Anlage V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ändernde Rechtsvorschrift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d zur Durchführ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bis zum Inkrafttreten des Vertrags eine Reihe von Rechtsvorschriften, insbesondere zu den nachfolgend aufgeführten Gesetzen, erlassen:

- I.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7620-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32 des Gesetzes vom 24. April 1986 (BGBl. I S. 560)
Das Gesetz gilt mit folgender Maßgabe:
 - a) (1) Die Deutsche Bundesbank richtet in Berlin eine dem Direktorium der Deutschen Bundesbank unterstehend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mit bis zu fünfzehn Filial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 die für die Geschäfte mit Kreditinstitu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wie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ihren öffentlichen Verwaltungen zuständig ist. Di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wird von einem Mitglied des Direktoriums der Deutschen Bundesbank geleitet. Bei ihr wird ein beratendes Gremium eingerichtet, das aus bis zu zehn von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nannten Mitgliedern besteht. Die Mitglieder werden für die Dauer von drei Jahren berufen. Höchstens die Hälfte der Mitglieder soll aus den verschiedenen Zweigen des Kreditgewerbes, die übrigen Mitglieder sollen aus der gewerblichen Wirtschaft, dem Handel, der Landwirtschaft sowie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schaft kommen.
(2) Das Gremium berät mit dem Leiter der Vorläufigen Verwaltungsstelle über Fragen der Währungs- und der Kreditpolitik, des Bankwesens und der Abwicklung des Zahlungsverkehrs.
 - b) Bezüglich der im 4. Abschnitt genannten währungspolitischen Befugnisse und des im 5. Abschnitt des Bundesbankgesetzes genannten Geschäftskreises gelten folgende Anpassungsregelungen:
 - (1) Die Verpflichtung zur Einlegung flüssiger Mittel gemäß § 17 BBankG gilt auch für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und deren Gebietskörperschaften.
 - (2) Solang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Voraussetzungen für Refinanzierung und Offenmarktgeschäfte nach den §§ 19 und 21 BBankG nicht gegeben sind, darf die Deutsche Bundesbank bei Geschäften mit Kreditinstituten von den Erfordernissen absehen, die in den §§ 19 und 21 BBankG vorgeschrieben sind, und auch andere als die dort genannten Geschäfte mit Kreditinstituten betreiben.
 - (3) Die Deutsche Bundesbank darf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assenkredit gemäß § 20 Abs. 1 Nr. 1 BBankG in Höhe von 800 Millionen Deutsche Mark gewähren.

(4) Die Deutsche Bundesbank darf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en öffentlichen Verwaltungen die in § 19 Abs. 1 Nr. 4 bis 9 BBankG bezeichneten Geschäfte gemäß § 20 Abs. 1 Nr. 3 BBankG vornehmen.

(5)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inschließlich ihrer Gebietskörperschaften sowie die Deutsche Reichsbahn und die Deutsche Post werden in Anwendung von § 20 Abs. 2 BBankG Anleihen, Schatzanweisungen und Schatzwechsel in erster Linie durch die Deutsche Bundesbank, andernfalls im Benehmen mit ihr begeben.

(6) Die Deutsche Bundesbank darf ungeachtet der Beschränkungen des § 19 Abs. 1 Nr. 3 BBankG Kreditinstituten Darlehen gegen Verpfändung der in Anlage I Artikel 8 § 4 bezeichneten Forderungen gegen den Ausgleichsfonds gemäß § 24 Abs. 1 BBankG gewähren.

- c) Die Deutsche Bundesbank arbeitet mit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Angelegenheiten von währungspolitischer Bedeutung eng zusammen. Der jeweils zuständige Minister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zur Sitzung des Zentralbankrats in Fragen der Geld- und Währungspolitik eingeladen.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der Deutschen Bundesbank diejenige Unterstützung und Hilfe gewähren, die diese zur Wahrnehmung ihrer Aufgaben benötigt.
- d) Mit Arbeitnehmern, die nicht von der Deutschen Bundesbank entsandt worden sind, kann die Deutsche Bundesbank vorübergehend abweichend von den geltenden gesetzlichen oder tariflichen Regel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rbeitsverträge abschließen, die den Besonderhei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chnung tragen. Das 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findet bis auf weiteres keine Anwendung auf di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und deren Filialen, die nach Artikel 12 der Anlage I dieses Vertrags eingerichtet werden.

II. Regelungen zu Spezialkreditinstituten

- a) Hypothekengesetz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7628-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8. Juni 1988 (BGBl. I S. 710)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Der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eht dem Bund gleich.
 2. Hypothekendarlehen dürf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in diesem Gesetz geregelten Geschäfte betreiben, soweit sie aus diesen Geschäften Rechte erwerben, die entsprechenden Rech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leichwertig sind.
 3. Das Vorzugsrecht im Konkurs nach § 35 besteht auch im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 b) Gesetz über die Pfandbriefe und verwandte Schuldverschreibungen öffentlich-rechtlicher Kreditanstalten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35-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3 des Gesetzes vom 24. April 1986 (BGBl. I S. 560)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Der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eht dem Bund gleich.
 2. Öffentlich-rechtliche Kreditanstalten dürf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in diesem Gesetz geregelten Geschäfte betreiben, soweit sie aus diesen Geschäften Rechte erwerben, die entsprechenden Rech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leichwertig sind.
 3. Das Vorzugsrecht im Konkurs nach § 6 besteht auch im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 c) Gesetz über Bausparkassen vom 16. November 1972 (BGBl. I S. 209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 Abs. 22 des Gesetzes vom 29. März 1983 (BGBl. I S. 377)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Der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eht dem Bund gleich.
2. Bausparkassen dürf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rlehen nach Maßgabe des § 7 Abs. 1 und 4 gewähren, soweit sie aus diesen Geschäften Rechte erwerben, die entsprechenden Rech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leichwertig sind.

III.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vom 11. Juli 1985 (BGBl. I S. 1472),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4 des Gesetzes vom 22. Dezember 1989 (BGBl. I S. 2408)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a) Kredite an den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sprechen Krediten an den Bund.

b) Gewährleistungen durch den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sprechen Gewährleistungen des Bundes.

c) Dem Postgiro- und Postsparverkehr der Deutschen Bundespost entsprechende Geschäfte der Deutschen Post stehen diesen Geschäften der Deutschen Bundespost gleich.

(2) Die §§ 21 bis 22a finden für den Sparverkeh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Spareinlagen auf Spargirokonten und Sparkonten keine Anwendung, sofern diese Einlagen vor dem 1. Juli 1990 eingezahlt worden sind. § 53 über Zweigstellen mit Sitz in einem anderen Staat ist auf Zweigstellen von Kreditinstituten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umgekehrt nicht anzuwenden.

(3) Soweit ein Kreditinstitut mit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i Inkrafttreten dieses Vertrags Bankgeschäfte in dem in § 1 Abs. 1 bezeichneten Umfang betreiben durfte, gilt die Erlaubnis nach § 32 als erteilt. § 61 Satz 2 gilt entsprechend.

(4) Das Bundesaufsichtsamt kann Gruppen von Kreditinstituten oder einzelne Kreditinstitute mit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n Verpflichtungen aufgrund dieses Gesetzes freistellen, wenn dies aus besonderen Gründen, insbesondere wegen der noch fehlenden Angleichung des Recht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gezeigt ist.

(5)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entscheidet im ersten und letzten Rechtszug über Klagen gegen Entscheidungen des Bundesaufsichtsamts nach diesem oder anderen Gesetzen oder wegen Untätigkeit des Bundesaufsichtsamts, wenn der Kläger seinen Sitz oder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t.

(6) Solange nicht einem Gerich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in § 28 Abs. 2, § 46 Abs. 2 und § 46a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genannten Aufgaben durch Gesetz oder Verordnung übertragen worden sind, übernimmt das Amtsgericht Charlottenburg diese Aufgaben. § 46b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gilt für Kreditinstitu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it der Maßgabe, daß an die Stelle des Konkursverfahrens das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tritt und daß die Gesamtvollstreckung nur auf Antrag des Bundesaufsichtsamtes eingeleitet werden kann.

IV. Gesetz über Kapitalanlagegesellschaft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4. Januar 1970 (BGBl. I S. 127),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22. Februar 1990 (BGBl. I S. 266)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Der Republik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eht dem Bund gleich.

2. § 13 Abs. 3 und 4 sind für Kapitalanlagegesellschaf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sinngemäß anzuwenden.
3. Bei den Vorschriften des 4. Abschnittes für Grundstücks-Sondervermögen is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gleichgestellt.

V.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3. Oktober 1983 (BGBl. I S. 1261),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6 des Gesetzes vom 19. Dezember 1986 (BGBl. I S. 2595)
Das Gesetz und die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lten mit folgender Maßgabe:

1. Inland im Sinne dieses Gesetzes und der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ist der gesamte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2. (1) Die Versicherungsaufsich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bliegt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Genehmigungen, die die Aufnahme des Versicherungsgeschäft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möglichen und versicherungsaufsichtliche Genehmigungen für Versicherungsunternehmen mit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nach Maßgabe des Abschnitts II Nr. 8 der Anlage II erteilt.
(2) Über Anfechtungsklagen gegen Entscheidungen des Bundesaufsichtsamt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oder Klagen wegen Untätigkeit des Bundesaufsichtsamts entscheidet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im ersten und letzten Rechtszug.
3. (1) Im Interesse der Versicherten und zur Gewährleistung der Erfüllbarkeit d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stehenden Verpflichtungen der Versicherer kann die zuständige Ste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rch Rechtsverordnung die den Versicherungsverträgen zugrundeliegenden allgemeinen Versicherungsbedingungen ändern und in Einzelfällen Ausnahmen von den geltenden Versicherungsbedingungen zulassen.
(2) Die Aufsichtsbehörde kann genehmigen, daß beim Abschluß von Versicherungsverträgen über Risiken,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legen sind,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einbart wird.
4. Die in der Kraftfahrzeug-Haftpflichtversicherung verwendeten Tarife sind von der Aufsichtsbehörde im Benehmen mit dem für die Preispolitik zuständigen Minist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genehmigen,
 - a) wenn durch den Tarif ei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Schadens- und Kostenverlaufs des einzelnen Versicherungsunternehmens sowie des gesamten Schadensverlaufs aller Versicherungsunternehmen angemessenes Verhältnis von Versicherungsbeitrag und Versicherungsleistung dauernd gewährleistet ist,
 - b) wenn durch den Tarif das Schutzbedürfnis der Geschädigten, das Bedürfnis der Versicherten, einen wirksamen Versicherungsschutz zu haben, und das Interesse der Versicherungspflichtigen an der Gewährung des Versicherungsschutzes zu einem angemessenen Beitrag hinreichend gewahrt sind.
5. Ein Versicherungsunternehmen mit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s im Zeitpunkt der Errichtung der Währungs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m Geschäftsbetrieb befugt war, bedarf keiner Erlaubnis. Für die laufende Aufsicht gelten die Bestimmungen dieses Gesetzes. Für die Anpassung des Geschäftsbetriebs an die Bestimmungen dieses Gesetzes bestimmt die Aufsichtsbehörde Übergangsfristen.
6. Für die Vermögensanlage der Versicherungsunternehm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die Republik dem Bund gleichgestellt.

VI. Folgeregelungen im Bereich der sozialen Sicherheit

1. Die Vorschriften über die Entsendung von versicherten Personen sollen auf verwandte Sachverhalte erweitert werden.
2. I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und der Arbeitsförderung sollen Beschäftigungszeiten i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ter den gleichen Voraussetzungen einen Anspruch auf Leistungen begründen wie Beschäftigungszeiten, die im Geltungsbereich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zurückgelegt worden sind.
Die auf diesen Zeiten beruhenden Lohnersatzleistungen sollen sich nach dem Bruttoarbeitsentgelt richten, das der Berechtig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zielt hat.
3. Die Vorschriften über das Ruhen der Leistunge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llen nicht bei Versicherten angewendet werden, die sich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halten.
4. Versicherte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im Krankheitsfall oder bei Schwangerschaft und Mutterschaft Sachleistung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Anspruch nehmen, sollen die Aufwendungen hierfür von ihrer Krankenkasse erstattet werden.
5. Im Rahme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sollen Zeiten der Versicherung in der Sozialversich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bestimmten Fällen wie Versicherungszeit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handelt werden.
6. Zei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llen für die Erfüllung von Anspruchs- und Anrechnungsvoraussetzungen sowie die Berechnung der Höhe der Ren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ücksichtigt werden.
7. Leistungen nach dem Fremdrentengesetz sollen für künftige Übersiedler ausgeschlossen werden.
8. Die Erbringung von Rentenleistungen i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oll ermöglicht werden.
9. Rentn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llen bei gewöhnlichem Aufenthal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ie Krankenversicherung der Rentner einbezogen werden.
10. Übersiedler aus de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llen hinsichtlich der Leistungen bei Krankheit und Mutterschaft grundsätzlich so gestellt werden, als wenn sie inn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hren Arbeitsplatz aufgegeben und in diesem Zusammenhang ihre Mitgliedschaft als Versicherungspflichtige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beendet hätten.

VII. Einführungsgesetz zum Handelsgesetzbuch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4101-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 des Gesetzes vom 23. Oktober 1989 (BGBl. I S. 1910)

Das Gesetz gilt mit folgender Maßgabe:

Bei der Anwendung des § 92c Abs. 1 des Handelsgesetzbuches in der ab 1. Januar 1990 geltenden Fassung steht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m Gebie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gleich.

VIII. Beabsichtigte Regelung zur Erleichterung der Tätigkeit von Rechtsanwälten und Patentanwälten au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 Rechtsanwälte dürfen im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Tätigkeit eines nach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zugelassenen Rechtsanwalts ausüben. Beschränkungen der Vertretungsbefugnis, die sich aus dem Erfordernis der Zulassung bei einem Gericht ergeben, bleiben unberührt. § 52 Abs. 2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ist auf die in Satz 1 bezeichneten Personen entsprechend anzuwenden.

2. Die in Nummer 1 Satz 1 bezeichneten Rechtsanwälte haben bei der Ausübung ihrer Tätigkeit im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 die Stellung eine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n Rechtsanwalts, insbesondere dessen Rechte und Pflichten, soweit diese nicht die Zugehörigkeit zu einer Rechtsanwaltskammer, den Wohnsitz oder die Kanzlei betreffen. Sie beachten bei der Ausübung ihrer Tätigkeit im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 die beruflichen Regeln für einen nach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zugelassenen Rechtsanwalt. Die berufrechtliche Ahndung einer schuldhaften Verletzung beruflicher Pflichten ist den zuständigen Stell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behalten. Diese werden von dem Verdacht einer solchen Pflichtverletzung unterrichtet.
3.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 Patentanwälte dürfen im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Tätigkeit eines nach der Patentanwaltsordnung zugelassenen Patentanwalts ausüben. Nummer 2 ist entsprechend anzuwenden.
4. Für die Anwendung der Vorschriften des Strafgesetzbuches über
 - Straflosigkeit der Nichtanzeige geplanter Straftaten (§ 139 Abs. 3 Satz 2),
 - Verletzung von Privatgeheimnissen (§ 203 Abs. 1 Nr. 3, Abs. 3 bis 5, §§ 204, 205),
 - Gebührüberhebung (§ 352) und Parteiverrat (§ 356)stehen die in Nummer 1 Satz 1 und Nummer 3 bezeichneten Personen den Rechtsanwälten, Anwälten und Patentanwälten gleich.
5. Die Nummern 1 bis 4 werden in Kraft treten, wen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für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n Rechtsanwälte und Patentanwälte entsprechende Vorschriften erlassen hat.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gibt den Tag des Inkrafttretens im Bundesgesetzblatt bekannt.

Anlage VI Regelungen,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weiteren Verlauf anzustreben sind

Im Verlauf der Erricht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sind folgende weitere Regelung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zustreben:

I. Umweltrech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die Voraussetzungen dafür schaffen, daß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baldmöglichst de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prechende Regelungen getroffen werden können:

1.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nebst Durchführungsregelungen
2. Abfallgesetz nebst Durchführungsregelungen
3. Benzinbleigesetz nebst Durchführungsregelungen
4. Chemikaliengesetz nebst Durchführungsregelungen
5. Wasserhaushaltsgesetz nebst Durchführungsregelungen

II. Wirtschafts- und Sozialunion

1. Güterkraftverkehrsgesetz
2. Personenbeförderungsgesetz
3. Insolvenzrecht
4. Einführung des Ordnungsrahmens und der Berufsstruktu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Bereich berufliche Bildung (Berufsbildungsgesetz: Erster Teil; Dritter Teil 2., 4., 6., 7. Abschnitt; Handwerksordnung: Zweiter Teil; 2., 4., 6., 7. Abschnitt, Dritter Teil; die auf diese Gesetze gestützten Ausbildungs- und Meisterprüfungsregelungen).
5. Gesetz über Sprecherausschüsse der leitenden Angestellten vom 20. Dezember 1988 (BGBl. I S. 2312, 2316).

Anlage VII Grundsätze für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zur Durchführung des Vertrags

Bei der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zur Durchführung des Vertrags werden die Vertragsparteien entsprechend Artikel 4 Abs. 3 des Vertrags nach folgenden Grundsätzen verfahren:

(1) Der Empfänger darf personenbezogene Informationen nur zu dem durch die übermittelnde Stelle angegebenen Zweck und unter den von ihr vorgeschriebenen Bedingungen nutzen. Eine Verwendung für einen anderen Zweck ist nur zulässig, wenn die übermittelnde Vertragspartei zugestimmt hat und wenn die Verwendung für diesen Zweck nach dem Recht des Empfängers zulässig ist. Die Zustimmung darf nur erteilt werden, wenn die Verwendung für den anderen Zweck auch nach dem Recht der übermittelnden Vertragspartei zulässig wäre.

Personenbezogene Informationen dürfen ausschließlich an die für die jeweilige Aufgabe zuständigen Behörden übermittelt werden. Eine Übermittlung an andere Stellen darf nur mit vorheriger Zustimmung der übermittelnden Stelle erfolgen.

(2)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unterbleibt, soweit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ß dadurch gegen den Zweck eines innerstaatlichen Gesetzes verstoßen würde oder schutzwürdige Interessen der betroffenen Personen beeinträchtigt würden.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unterbleibt insbesondere dann, wenn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ß die Verwendung der übermittelten Informationen nicht in Einklang mit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steht oder dem Betroffenen aus der Verwendung der Informationen erhebliche Nachteile erwachsen, die im Widerspruch zu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stehen.

(3) Der Empfänger unterrichtet die übermittelnde Stelle auf Ersuchen über die Verwendung der übermittelten Informationen und die dadurch erzielten Ergebnisse.

(4) Die übermittelnde Stelle ist verpflichtet, auf die Richtigkeit der zu übermittelnden Informationen zu achten. Erweist sich, daß unrichtige oder zu vernichtende personenbezogene Informationen übermittelt worden sind, so ist dies dem Empfänger unverzüglich mitzuteilen. Dieser ist verpflichtet, die Berichtigung oder Vernichtung vorzunehmen.

(5) Dem Betroffenen ist auf Antrag über die zu seiner Person vorhandenen Informationen sowie über den vorgesehenen Verwendungszweck Auskunft zu erteilen. Eine Verpflichtung zur Auskunftserteilung besteht nicht, soweit eine Abwägung ergibt, daß eine Auskunft den Verwendungszweck oder schutzwürdige Interessen Dritter gefährden würde.

(6) Die Übermittlung und der Empfa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sind aktenkundig zu machen.

(7) Im übrigen werden die Grundsätze des Übereinkommens des Europarates über den Schutz des Menschen bei d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vom 28. Januar 1981 beachtet.

Anlage VIII Allgemeine Verfahrensvorschriften für das Schiedsgericht

-

Anlage IX Möglichkeiten des Eigentumserwerbs privater Investoren an Grund und Boden sowie an Produktionsmitteln zur Förderung gewerblicher arbeitsplatzschaffender Investitionen

Die Gewährleistung des Eigentums privater Investoren an Grund und Boden sowie an Produktionsmitteln gemäß Artikel 2 des Vertrags einschließlich der Freiheit, Grund und Boden und sonstige Produktionsmittel zu erwerben, zu nutzen und darüber zu verfügen, erfolgt von sei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ährend einer Übergangszeit mit folgender Maßgabe:

Die bisher fehlende Möglichkei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rundstücke zu Eigentum zu erwerben, ist ein erhebliches Investitionshindernis. Unternehmen brauchen Standorte, an denen sie über Grundstücke und alle Produktionsmittel frei verfügen könn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ird dieses Investitionshemmnis

für Investitionen aus der Bundesrepublik und dem Ausland auch im Interesse ihrer eigenen Unternehmen beseitigen, um den dringend notwendigen Anstoß zur Modernisierung ihrer Wirtschaft auszulösen.

Zur Verwirklichung dieses Zieles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Vorschriften ihrer Rechtsordnung ändern oder außer Kraft setzen, die dem entgegenstehen. Mit Inkrafttreten des Vertrags und der Änderung entgegenstehender Vorschriften wir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afür sorgen, daß Eigentum an Grund und Boden auch tatsächlich erworben werden kann. Dazu werden folgende erste Schritte unternommen:

1. Es werden in ausreichender Zahl und Größe Grundstücke in Gewerbegebieten bereitgestellt, die für Gewerbeansiedlungen und sonstige arbeitsplatzschaffende Investitionen mit entsprechender Nutzungsbindung zu Eigentum erworben werden können. Auf diese Weise wird die Sozial- und Umweltverträglichkeit von Gewerbeansiedlungen gewährleistet. Die Mitwirk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organe wird sichergestellt.
2. Für Investoren, die Grundstücke an speziellen Standorten benötigen, auch etwa innerhalb des Stadtgebietes (beispielsweise für Handel, Gewerbe und Dienstleistungen), werden solche Grundstücke ebenfalls in ausreichendem Umfang zum Erwerb zur Verfügung gestell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hofft sich davon auch einen Beitrag zur Erneuerung und Belebung ihrer Innenstädte.
3. Im Zuge der Auswahl der zur Umwandlung in Kapitalgesellschaften geeigneten volkseigenen Unternehmen ist volkseigener Grund und Boden wie Anlagevermögen der Unternehmen zu bewerten. Nach der Umwandlung ist den neu entstandenen Kapitalgesellschaften der volkseigene Grund und Boden zu Eigentum zu überlassen. Damit werden ihre Möglichkeiten zur Nutzung von Grundstücken, insbesondere für Zwecke der Kreditaufnahme, erweitert und die Voraussetzungen für Beteiligungen durch private Investoren verbessert. Darin liegt zugleich ein wesentlicher Beitrag zur langfristigen Sicherung von Arbeitsplätzen.
4. Da es zunächst an einem funktionsfähigen Markt für Grund und Boden und entsprechenden Marktpreisen fehlen wird, kann im Rahmen der Vertragsfreiheit mit den üblichen Klauseln vorgesehen werden, den zunächst vereinbarten Grundstückspreis nach Ablauf einer Übergangsfrist einer Überprüfung und nachträglichen Anpassung zu unterziehen. Dabei müssen Verfügbarkeit und Beleihungsfähigkeit des Grundstücks gesichert, die Übergangszeit kurz und die Kalkulierbarkeit der Belastung für den Erwerber gewährleistet sein.

Protokollerklärungen

Bei Unterzeichnung des Vertrag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urden mit Bezug auf diesen Vertrag folgende Erklärungen abgegeben:

1. Beide Vertragsparteien erklären zu Artikel 2 Absatz 1 Satz 2 des Vertrags: Freizügigkeit im Sinne dieser Vorschrift umfaßt auch die Einreise von natürlichen Personen einschließlich der Angehörigen von ethnischen Minderheiten in das Währungsgebiet, die im Besitz eines Personalausweises, eines Passes oder eines Paßersatzpapier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2.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klärt, daß sie Staatsangehörigen und Unternehmen aller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r Grundlage der Gegenseitigkeit Gleichbehandlung mit natürlichen Personen und mit Unternehm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währen wird, soweit der Zuständigkeitsbereich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berührt sein könnte und soweit in diesem Vertrag nicht ausdrücklich Abweichendes vereinbart ist; das Protokoll über den innerdeutschen Handel bleibt unberührt.
3. Beide Vertragsparteien verstehen unter dem 3-Monats-FIBOR im Sinne von Artikel 8 § 4 Absatz 1 Satz 3 der Anlage I den jeweiligen Zinssatz, der am zweiten Geschäftstag in Frankfurt am Main vor dem Beginn einer Zinsperiode entsprechend § 2 Absatz 3 der Bedingungen für die Anleih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1990 (Wertpapier-Kenn-Nummer 113-478) ohne den darin vorgesehenen Abschlag vierteljährlich festgestellt wird.

4. Im Zusammenhang mit Abschnitt I Nummer 3 der Anlage IV erklär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Zur Sicherstellung der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im Wettbewerb werden unverzüglich die entsprechenden Richtlinien erlassen, die von den öffentlichen Auftraggebern spätestens ab dem 1. Januar 1991 anzuwenden sind.

Bonn, den 18. Mai 1990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Theodor Waigel

Für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Walter Romberg

**Anhang EV Auszug aus EinigVtr Anlage I Kapitel IV Sachgebiet B Abschnitt
III**

(BGBI. II 1990, 889, 994)

- Maßgaben für das beigetretene Gebiet (Art. 3 EinigVtr) -

Abschnitt III

Bundesrecht tritt in dem in Artikel 3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mit folgenden Maßgaben in Kraft:

1. Die im Vertrag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BGBI. 1990 II S. 518) getroffenen Regelungen über die Errichtung einer Währungsunion einschließlich der Regelungen über die Zuständigkeit und Befugnisse der Deutschen Bundesbank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it folgenden Maßgabe:
Innerhalb von zwölf Monaten nach Wirksamwerden des Beitritts wird das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angepaßt.

문서 번호 32

동서독 간의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독일통일위원회의
입장과 제안

1990 년 5 월 23 일

담당자 / 기관: Volkskammer der DDR, Volkskammer-Vorsitzende Bergmann-Pohl,
Ausschuß Deutsche Einheit der Volkskammer der DDR

내용:

이 문서에서는 동독최고인민회의에 설치된 독일통일위원회가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에 관한 법“을 승인하기를 최고인민회의에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통일위원회의 견해는 이 조약이 거의 완성단계에 달하였기 때문에 동독 정부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989 년 10 월 7 일 이전에 동독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이 토지와 산림을 매수와 관련된 토지법, 1945/46 년에 시행된 토지개혁과 1945 년/49 년에 승전연합국법에 따른 토지개혁을 통해 동독주민이 획득한 소유권의 보장, 토지개혁과 승전연합국법의 틀을 벗어나 몰수된 재산의 검토, 투기방지를 위한 규정. 국유재산의 민영화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우선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국가예산의 적자를 보충하고 국가채문의 감축 그리고 국가재원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동서독 간의 환경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혜택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독일의 동쪽 국경이 오더나이스 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통일된 독일은 대량학살무기를 포기하며 군사동맹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독일통일위원회는 동독 정부가 작성해서 입법화 해야 할 사안들과 동독 정부가 실현해야 할 조치와 규정들의 목록도 작성하였다. 이 문서의 부록에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연맹 90/녹색당“의 소수의견이 첨부되었다. 녹색당은 통일에는 동의하지만 동서독 정부가 국가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헌이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였다.

출처: Volkskammer der DDR, Drucksache 24 a

d. 0

**Kopie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Zitierweise: Archiv Bundesstiftung Aufarbeitung, 23. 5. 1990

Niederschrift

Markus Meckel, AGo

Zum 3. Treffen im Rahmen 2 + 4 auf Beamtenebene am
22. 5. 1990 in Bonn

Tagesordnung:

1. Allgemeiner Meinungs austausch über die mögliche Struktur der abschließenden völkerrechtlichen Regelung
2. Grundsätze zur Behandlung der Grenzfrage; Bericht über Kontakte beider deutscher Staaten mit Polen; Beteiligung Polens an der Sitzung in Paris.
3. Nächste Sitzungen auf Außenminister- bzw. Beamtenebene.

Vorsitz: Herr Duforque

Zur möglichen Struktur der abschließenden völkerrechtlichen Regelung

Frankreich schlug vor, das Dokument mit einer allgemeinen politischen Erklärung (einer Art Präambel) zu beginnen. Daran anschließen sollte sich eine Aufzählung verschiedener Rechtsinstrumente, um 3 Ziele zu erreichen:

1. Einheit Deutschlands durch die Vereinigung von BRD, DDR und Berlin.
2. Beendigung des bisherigen Statuts für Berlin.
3. Bekräftigung der Souveränität des vereinten Deutschlands und Ablösung der 4-Mächte-Rechte und -verantwortlichkeiten.

In der abschließenden Regelung sollen eine Reihe weiterer Rechtsakte enthalten sein:

- der deutsch-polnische Vertrag über die Westgrenze Polens,

- Mitteilung über jene Bestimmungen der Verfassung des künftigen Deutschlands, die die Endgültigkeit der deutschen Grenzen bestätigen.

Großbritannien, die BRD und die USA stimmten diesem generellen Schema zu und charakterisierten sie als ausgezeichnete Arbeitsgrundlage.

Die DDR stimmte den französischen Vorstellungen grundsätzlich zu und hob hervor, daß die abschließende Regelung auch Aussagen zum künftigen militärisch/politischen Status Deutschlands, zum Aufenthalt ausländischer Truppen sowie zum Verzicht des künftigen Deutschlands auf ABC-Waffen enthalten müsse.

Von seiten der UdSSR wurde erneut bekräftigt, daß sie von einem einzigen einheitlichen Dokument ausgehe, das Lösungen für alle äußeren Aspekte enthalte.

Da alle Fragen miteinander verknüpft seien, sollten sie auch in einem geschlossenen Dokument angenommen werden. Der Vertreter der UdSSR erklärte sein grundsätzliches Einverständnis mit den französischen Vorstellungen und nannte als Elemente der abschließenden Regelung

- politische Präambel
- Grenzfragen
- freiwilliger Verzicht Deutschlands auf den Besitz von ABC-Waffen
- militärisch/politische Aspekte der Vereinigung bzw. Klärung des militärisch-politischen Status des künftigen Deutschlands
- Ablösung der 4-Mächte-Rechte und -verantwortlichkeiten; zeitweiliger Aufenthalt von ausländischen Streitkräftekontingenten
- Erklärung Deutschlands, daß von ihm nur Frieden ausgehen werde
- Erklärung, daß die Einigung Deutschlands Frieden und Stabilität in Europa stärken werde.

Die Schlüsselfrage bleibe für die UdSSR die Erhaltung des bestehenden Kräftegleichgewichts, da sonst schwerer Schaden für die eigene Sicherheit wie für die Sicherheit der Nachbarstaaten entstehe. Das abschließende Dokument müsse eine Bestätigung enthalten, dass das künftige Deutschland unter Berücksichtigung seiner zentralen Lage in Europa freiwillig darauf verzichtet, sein militärisches und menschliches Potential zum Nutzen eines beliebigen politischen und militärischen Bündnisses beizusteuern. Diese Bestimmungen müssen nicht für ewig gelten. Wenn neue Strukturen entstehen, könne dies für eine kurze Übergangsperiode sein. Für die UdSSR stehe fest, daß das künftige Deutschland in diesen Strukturen einen würdigen Platz und eine bedeutende Rolle einnehmen werde. Die UdSSR sei bereit, diese Frage mit viel Vertrauen anzugehen, so daß im günstigsten Falle die Definition eines besonderen politischen Status Deutschlands auch entfallen könnte.

Die Berlin-Fragen sollten gelöst werden, bis ein gesamtdeutsches Parlament und eine gesamtdeutsche Regierung gebildet werden.

Der Vertreter der USA betonte, daß im Abschließenden Dokument jede Diskriminierung des künftigen Deutschlands ausgeschlossen sein müsse. Hauptziel sei die Erhaltung der vollen Souveränität und die Ablösung der 4-Mächte-Rechte. Die politisch-/militärischen Fragen sollen entweder vo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oder dem künftigen Deutschland in eigener Souveränität geklärt werden. Auch könne in den 2 + 4-Gesprächen nicht gesamteuropäische Arbeit geleistet werden. Das künftige Deutschland soll auf freiwilliger Grundlage seine militärischen Aktivitäten einschränken. Gleichzeitig habe es nach dem Prinzip 1 der Schlußakte das Recht,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bzw. Verträgen anzugehören, denen es beizutreten wünscht.

Der Vertreter Frankreichs stellte fest, daß hinsichtlich der Behandlung politisch/militärischer Fragen es unterschiedliche Auffassungen gibt: Zum einen die Forderung nach entsprechenden Aussagen im abschließenden Dokument, zum anderen die Vorstellung, das künftige Deutschland habe darüber souverän seine Entscheidung zu treffen.

Der Vertreter der UdSSR bekräftigte daraufhin, daß die legitimen Sicherheitsinteressen aller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Das sei eine von den höchsten Repräsentanten aller Beteiligten abgegebene Erklärung. Folglich gelte sowohl die Entscheidungsfreiheit hinsichtlich der künftigen Bündniszugehörigkeit, aber auch die Verpflichtung, völkerrechtliche Verträge nach Treu und Glauben zu erfüllen. Außerdem gelte es, das Potsdamer Abkommen zu respektieren, in dem Festlegungen gefordert werden, daß von deutschem Boden nie wieder Krieg ausgehe. Wenn politisch-militärische Fragen im abschließenden Dokument geregelt würden, bedeute das nicht, daß damit das deutsche Volk diskriminiert werden soll. Es gehe um eine alle befriedigende Lösung. Die UdSSR hege keinerlei Einwände gegen die Anwendung des Prinzips auf Selbstbestimmung, wenn es die Grundlage für Absprachen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darstelle. Wenn es aber um das künftige Gleichgewicht in Europa gehe, müssen die Interessen aller berücksichtigt werden. Es könne nicht bewiesen werden, daß ein Ausscheiden der DDR aus dem Warschauer Vertrag eine Stärkung der Sicherheit der Sowjetunion bzw. Europas bedeute. Das könne man der sowjetischen Öffentlichkeit nicht zumuten. Es gehe um die volle Berücksichtigung der Interessen Deutschlands wie seiner Nachbarn.

Der Vertreter der BRD erklärte, daß die Frage eines einheitlichen Dokuments oder einer Reihe von Dokumenten im Moment offen bleiben könne. Er stimmte einer Aussage über

einen Verzicht zur Herstellung von ABC-Waffen durch das künftige Deutschland im abschließenden Dokument zu. Vorstellbar seien auch Aussagen, daß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ein wichtiger Beitrag zu Frieden und Stabilität in Europa sein müsse und von deutschem Boden nur Frieden ausgehen dürfe. Die BRD erkenne zugleich an, daß im Prozeß der Vereinigung über den zeitweiligen Aufenthalt ausländischer Streitkräfte Festlegungen getroffen werden müssen. Dies könne aber nur von der Regierung eines vereinten Deutschlands geschehen.

Denkbar sei eine Aussage über die Bereitschaft des vereinten Deutschlands, mit der UdSSR in Gespräche einzutreten über den weiteren, aber zeitlich begrenzten Aufenthalt ihrer Truppen. Diese Aussage könne aber nicht im Rahmen 2 + 4 getroffen werden.

Was die Definition des politisch-militärischen Status anbetrifft, gebe es volle Bereitschaft, die legitimen Sicherheitsinteressen der UdSSR zu berücksichtigen. Dabei müsse es nicht bei einer Bekundung des Willens bleiben. Es gebe dazu konkrete Vorstellungen:

- keine Ausdehnung von NATO-Strukturen auf das Gebiet der heutigen DDR,
- Bereitschaftserklärung des künftigen Deutschlands, über den zeitlich befristeten Verbleib sowjetischer Truppen in der DDR zu verhandeln.

Im Rahmen der 2 + 4-Gespräche könne aber keine Festlegung getroffen werden, die Deutschland singularisiert. In diesem Sinne dürfe ihm auch nicht das Recht vorenthalten werden, Mitglied eines Bündnisses zu sein.

Der Vertreter der UdSSR stellte daraufhin die Frage, wie eine Nichtausdehnung der militärischen Strukturen der NATO auf die DDR fixiert werden könne. Es gehe schließlich um die Ausweitung von Kompetenzen. Zweiseitige Erklärungen

seien dafür nicht ausreichend.

Der Vertreter der BRD erklärte daraufhin, es könne Erklärungen des vereinten Deutschlands wie der NATO geben. Aber nicht im Rahmen 2 + 4.

Diese kategorische Feststellung ändere nichts an der Zusicherung seitens der BRD, daß diese Frage gegenüber der UdSSR befriedigend geregelt werden müsse.

Der Vertreter der UdSSR erklärte, daß die Antwort seitens der BRD nicht befriedigend sei. Eine Lösung dieser Frage sei ohne die Beteiligung aller davon betroffenen Staaten nicht möglich. Die UdSSR werde sich nicht mit einseitigen Erklärungen der deutschen Regierungen oder einer deutschen Regierung zufrieden geben, es gehe um klare Festlegungen zur Berücksichtigung gegenseitiger Interessen.

Die UdSSR werde in den nächsten Tagen ein Dokument, in dem auch die Frage gesamteuropäischer Strukturen Berücksichtigung finde, vorlegen.

Von Seiten der DDR wurde erneut bekräftigt, daß die Frage des politisch-militärischen Status des künftigen Deutschland eine klare Beantwortung finden müsse. Mit der Einheit dürfe kein Sonderstatus für Deutschland definiert werden. Die Einheit müsse in neue Sicherheitsstrukturen eingeordnet werden, nicht zu Lasten der Nachbarn gehen und nicht mit Vertragsbrüchen begonnen werden. Die Garantien, die in diesem Zusammenhang formuliert werden, müßten so sein, daß kein anderer Staat sich vor Deutschland schützen müsse.

Das gelte auch für die UdSSR, die solche Zusicherungen erhalten müsse. Die DDR sei bereit, verbindlich einzuräumen, daß die NATO nicht auf ihr Territorium ausgedehnt werde. Wenn die DDR aus dem Warschauer Vertrag ausscheiden solle, darf das nicht zum Schaden der UdSSR reichen. Die DDR sprach sich erneut dafür aus, geeignete neue Sicherheitsgarantien zu vereinbaren.

Der Vertreter der UdSSR dankte für diese eindeutigen Erklärungen.

Der Vertreter Frankreichs faßte zum 1. Tagesordnungspunkt zusammen:

Übereinstimmung bestehe, daß

- die Sicherheitsinteressen eines jeden Beteiligten zu berücksichtigen sind;
- ein vereinigtes Deutschland nicht singularisiert werden darf;
- die Berücksichtigung der Sicherheitsinteressen durch eine Reihe konkreter Maßnahmen erfolgen muß.

Unterschiede bestehen dahingehend, wo diese Fragen entschieden werden müssen,

- welche Fragen im einzelnen unter diesem Tagesordnungspunkt diskutiert werden müssen.
Darüber gelte es weiter nachzudenken. Er gehe davon aus, daß aber der übliche Teil der vorgeschlagenen Struktur für das abschließende völkerrechtliche Dokument von allen Teilnehmern akzeptiert werde.

Der Vertreter der UdSSR bekräftigte erneut die Notwendigkeit einer Paketlösung für alle außenpolitischen Aspekte. Der Vertreter der BRD hob hervor, die Frage, an welchem Verhandlungstisch ein Problem gelöst werde, habe keinerlei Auswirkungen auf den Grad der Verbindlichkeit der jeweiligen Lösung.

Zur Behandlung der Grenzfrage hob der Vertreter Frankreichs hervor, es bestehe Übereinstimmung.

- über den völkerrechtlich verbindlichen Charakter der zutreffenden Regelung
- über die Notwendigkeit eines trilateralen bzw. bilateralen Ansatzes (DDR, BRD, Polen) zur Regelung der polnischen Westgrenze sowie
- eines 6er Ansatzes zur Frage der Grenzen insgesamt.

Der Vertreter der UdSSR stimmte dem Herangehen Frankreichs an die Behandlung der Grenzfrage im abschließenden Dokument zu. Der 6er Ansatz sollte eine Aussage enthalten, daß das vereinte Deutschland aus der BRD, der DDR und Groß-Berlin bestehe. Außerdem solle eine Festlegung enthalten sein, daß das künftige Deutschland keinerlei territoriale Ansprüche erhebe. Der Vertreter der UdSSR schlug vor, im Dokument zuerst die allgemein-prinzipielle Grundlage (6er Ansatz) danach die konkrete Bezugnahme auf die polnische Westgrenze aufzuführen. Er sprach sich dafür aus, diese Frage bis zum Außenministertreffen in Paris abschließend zu klären.

Der Vertreter der BRD informierte, daß am 18. Mai in Bonn die 2. Verhandlungsrunde DDR-BRD-Polen zur Frage der polnischen Westgrenze stattgefunden habe. Übereinstimmung bestehe, daß das vereinte Deutschland einen Vertrag mit Polen abschließen werde, indem in völkerrechtlich verbindlicher Form die bestehende deutsch-polnische Grenze bestätigt, anerkannt wird. Solange es aber noch keine gemeinsame Regierung gebe, werde man Polen die Garantie dafür geben, daß von einem vereinigten Deutschland tatsächlich ein solcher Vertrag abgeschlossen werde. Das könne wie folgt geschehen:
Die Parlamente beider deutscher Staaten verabschieden gleichlautende Resolutionen, in denen in eindeutiger Form Aussagen zur deutsch-polnischen Grenze enthalten sind, die in dem späteren Vertrag übernommen werden könnten.
Diese Resolutionen werden von beiden Regierungen förmlich an die Regierung Polens übermittelt, um ihre völkerrechtliche Relevanz zu erhöhen.
Die BRD vertrete die Auffassung, daß damit ein ausreichendes Maß an politischer Bindung des künftigen Deutschland gegeben sei. Die polnische Seite bestehe jedoch auf der Ausarbeitung eines Vertrages schon jetzt. Außerdem gehe der polnische Vertragsentwurf weit über eine Grenzregelung hinaus. Eine Fortsetzung der trilateralen Gespräche sei für den 29. Mai in Berlin vereinbart.

Der Vertreter der DDR bekräftigte sein Einverständnis mit der gegebenen Darstellung. Er wiederholte den bekannten Standpunkt der DDR, der alles unterstütze, was Polen für seine Sicherheit als notwendig ansehe. Die DDR bestehe darauf, daß dies auch in souveräner Weise für das künftige Deutschland vor der Welt bezeugt werde.

Kopie
Archiv
Zusammenfassung der SED-Direktion
für die Außenbeziehungen
Minister Meusel, Ake

Der Vertreter der BRD erläuterte Vorstellungen zur Regelung der Grenzfrage im Rahmen der 2 + 4-Verhandlungen.

1. Zunächst trilateral, dann bilateral wird eine Einigung über einen Grenzvertrag mit Polen erarbeitet. Diese Vereinbarung wird den anderen 4 Teilnehmern zur Kenntnis gegeben.
2. Die Bundesregierung ist bereit, eine Mitteilung abzugeben, daß das vereinte Deutschland aus der BRD, der DDR und Berlin bestehen wird.
3. Im abschließenden Dokument der 2 + 4-Gespräche wird den vier Mächten die Erklärung zur Kenntnis gegeben, daß das vereinte Deutschland keinerlei Gebietsansprüche hegt und keine erheben wird.
4. Die Bundesregierung ist bereit mitzuteilen, daß die künftige Verfassung des vereinten Deutschland keine Bestimmungen enthalten wird, wie sie der § 23 Satz 2 sowie der § 146 des Grundgesetzes der BRD beinhaltet.
5. Diese Mitteilung wird den vier Mächten zur Kenntnis gebracht.

Der Vertreter der USA charakterisierte diese Vorstellungen als gute Grundlage für das weitere Vorgehen. Er schlug vor, diesen Rahmen zur Bearbeitung der Grenzproblematik den Ministern zur Bestätigung vorzulegen.

Von seiten der DDR wurde das prinzipielle Einverständnis mit diesem Rahmen unter dem Vorbehalt erklärt, daß

- die von den jeweiligen Staaten vertretene Position nicht unberücksichtigt bleibt sowie
- eine völlig eindeutige Aussage über die künftige Verfassung getroffen (Hinweis u. a. auf Art. 116) und
- die polnische Meinung dazu gehört wird.

Der Vertreter der UdSSR hob zu den Vorschlägen der BRD hervor, er bevorzuge eine Regelung dieser Frage, die von allen sechs Staaten unterzeichnet werden könne. Dies erhöhe das juristische Niveau; was die polnische Grenze anbetreffe, müsse zuvor Polen befragt werden.

Der Vertreter der BRD schloß Unterschriften der "Sechs" für bestimmte Teile der Regelungen nicht aus. Es müsse aber sorgfältig berücksichtigt werden, daß es sich einmal handle um freiwillige Entscheidungen beider deutscher Staaten auf Grundlage der Souveränität (z. B. keine Gebietsansprüche, Gestaltung der Verfassung usw.) in Form von Mitteilungen sowie zum anderen um Verpflichtungen des künftigen Deutschland, deren Einhaltung nicht angezweifelt werden könne und deshalb auch keiner Garantien durch andere bedürfe.

Der Vertreter der BRD wandte sich aber ausdrücklich gegen Vorstellungen der DDR, dabei auch Art. 116 des Bonner Grundgesetzes einzubeziehen. (Staatsbürgerschaft unter Bezugnahme auf das Gebiet des Deutschen Reiches nach dem Stande vom 31. Dezember 1937).

Der Vertreter der USA erklärte, daß für ihn die Form der Mitteilung bzw. Kenntnismahme in den vom Vertreter der BRD skizzierten Fällen akzeptabel sei. Aus den Gesprächen von Präsident Bush mit dem polnischen Ministerpräsidenten Mazowiecki habe man den klaren Eindruck gewonnen, daß auch Polen ein solches Herangehen für möglich halte. Die Abstimmung zur Aussage der polnischen Westgrenze müsse aber mit Polen selbst erfolgen.

Hinsichtlich der Modalitäten einer Beteiligung Polens an den 2 + 4-Gesprächen wurde von allen Teilnehmern bekräftigt, daß Polen nicht siebenter Teilnehmer dieser Verhandlungen ist. Es wurde vereinbart, Polen auf dem Ministertreffen in Paris zum zweiten Teil des Arbeitstages einzuladen. Sinngemäß gilt das auch für das vorausgehende Beamtentreffen.

Zum Termin des Außenministertreffens in Berlin konnte keine Übereinstimmung erreicht werden. Es wurde festgelegt, daß jeder Teilnehmer der DDR schnellstmöglich einen Terminvorschlag für die Woche vom 22. - 28. Juni 1990 übermittelt.

Das nächste Beamtentreffen wurde auf den 9. Juni in Berlin festgelegt.

Dem Außenministertreffen in Paris am 17. Juli soll ein Beamtentreffen am 4. Juli (Termin wird in Aussicht genommen) unter Einladung Polens vorausgehen.

Beim Meinungsaustausch über die inhaltliche Arbeit auf der Außenministertagung in Berlin wurde vereinbart, daß zwei Dokumente unterbreitet werden:

- ein Schema für die Struktur der abschließenden völkerrechtlichen Regelung.
- Grundsätze zur Behandlung der Grenzfragen.

Diese Dokumente sollen im Ergebnis der Sitzung auf Beamten-ebene zusammengestellt und präzisiert werden.

Vom Vertreter der DDR wurde angeregt, auf der Sitzung in Berlin insbesondere Fragen des politisch-militärischen Status des künftigen Deutschland unter Einbeziehung geeigneter gesamt-europäischer Sicherheitsstrukturen sowie Berlin-Fragen (z. B. Luftverkehr) zu erörtern.

Von seiten Frankreichs und der BRD wurden die zusätzlichen Vorschläge der DDR skeptisch beurteilt. Im Ergebnis der Diskussion einigte man sich auf einen Vorschlag des Vertreters Großbritanniens, die Erörterung von Fragen des Luftverkehrs durch Vertreter der Botschaften in Berlin anzuregen.

Wenn diese Arbeiten zufriedenstellend vorankämen, könnten sie im Rahmen der 2 + 4-Gespräche fortgesetzt werden.

Alle Teilnehmer sind aufgefordert, ihre Vertreter für eine solche Arbeitsgruppe in Berlin zu benennen.

Von seiten der UdSSR wurde Einverständnis erklärt, im wesentlichen auf der Grundlage der beiden vorgeschlagenen Dokumentenentwürfe zu arbeiten. Sie bedürften jedoch weiterer Präzisierungen. Der Vertreter der UdSSR unterstützte die Anregung der DDR, über politisch-militärische Aspekte im Kontext künftiger Sicherheitsstrukturen zu sprechen.


Krabatsch

문서 번호 33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4차 회의 (부록: 동독 기업의 수익성, 도이치마르크로 전환시
기업의 재정상황과 재산의 가치의 평가를 위한 DM 개시 대차대조표)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보기쉬, 신탁청 이사회 임원, 크라우제
청장, 최고인민회의 각 당 대표, 동독 경제부 대표, 서독 연방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비서국 대표

내용: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의 4차 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1990년 5월까지 진행된 신탁청의 업무와 개별 기업의 수익성 검토 그리고 신탁청이 본 재산평가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크라우제 신탁청 청장이 기업의 민영화 상황에 관해 보고하고, 이어서 차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나아가 신탁청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5월 22일까지 이미 273개의 인민소유 기업이 유한회사로 전환되었고, 588개의 기업을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마르크가 도입되고 난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다. 이 문서의 부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토 대상이었던 2200개의 인민소유 기업 중에서 31%만이 도이치마르크의 도입 이후에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고, 42%는 일단은 적자를 보겠지만 회생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27%는 파산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이치마르크로 전환시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와 재정상황을 평가하기 위대차대조표의 작성에 관한 법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을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서독기업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문서의 부록에서는 나아가 - 소유권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토재를 제외한 - 동독 기업의 재산평가에 관한 정보와 3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평가기준을 볼 수 있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A 1/17490

Berlin, 25. 5. 1990

56

Beschlußprotokoll
der 4. Sitzung des Wirtschaftsausschusses am 23. 5. 1990
- 9.00 Uhr -

Leitung der Sitzung:

Herr Bogisch
Stellvertreter des Vorsitzenden
des Wirtschaftsausschusses

Tagesordnung:

1. Bekanntgabe und Bestätigung der Tagesordnung
2. Protokollbestätigung
3. Information zum Stand der Ausarbeitung eines "Leitliniengesetzes zur Umwandlung des Volkseigentums in Privateigentum und andere Eigentumsformen"
4. Beratung des Beschlußvorschlages zu den überwiesenen Anträgen der Fraktionen zur Einsetzung eines Parlamentsausschusses zur Kontrolle der Treuhandanstalt
5. Beratung der dem Wirtschaftsausschuß überwiesenen Gesetzentwürfe
 - Drucksache Nr. 24
 - Drucksache Nr. 19
6. Termine und Verschiedenes
 - Eingabenbearbeitung
 - Organisatorisches
 - Verschiedenes
 - . Vorschlag von dänischen Abgeordneten zur Durchführung einer gemeinsamen Wirtschaftskonferenz
 - . Information zur Teilnahme an der Parlamentarischen Versammlung des Europarates in Budapest
 - vorläufige Tagesordnung der 5. Sitzung des Wirtschaftsausschusses

zu 1. Bekanntgabe und Bestätigung der Tagesordnung

Der von Herrn Bogisch vorgeschlagenen Tagesordnung wurde zugestimmt.

zu 2. Protokollbestätigung

Das vorliegende Protokoll der 3. Sitzung wurde bestätigt.

zu 3. Information zum Stand der Ausarbeitung eines "Leitlinien-gesetzes zur Umwandlung des Volkseigentums in Privateigen-tum und andere Eigentumsformen"

Das Mitglied des Direktoriums der Treuhandanstalt, Herr Direktor W. Krause, konzentrierte sich in seiner In-formation auf folgende drei Schwerpunkte:

1. Stand der Umwandlung von volkseigenen Betrieben in Ka-pitalgesellschaften
2. gegenwärtiger Stand der Erfassung und Bewertung des Volksvermögens.
3. Zur Entwicklung der Rentabilität

Die Schwerpunkte der Information sind dem 4. Sitzungspro-tokoll als Anlage 1 beigelegt.

Zur Untersetzung der Ausführungen werden dem 4. Sitzungs-protokoll weitere Anlagen beigelegt.

Anlage 2 "Rentabilitätseinschätzungen der Betriebe auf DM-Basis"

Anlage 3 "DM-Eröffnungsbilanzen"

Anlage 4 "Information über die vorläufigen Ergebnisse der Vermögensbewertung in 3 Betrieben - Bei-spiele -"

Im Mittelpunkt der ausführlichen Diskussion standen folgende Komplexe:

- Bewertung von Grund und Boden, Berücksichtigung in den DM-Eröffnungsbilanzen und Erarbeitung eines Richtwertkatalogs zur Bewertung von Grund und Boden
- Kapitalgesellschaften erfordern Eigentumsrechte an Grund und Boden
- Privateinlagen sind in den neu zu bildenden GmbH auf Grund fehlender gesetzlicher Grundlagen eingeschränkt
- Einbeziehung von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verschiedener Länder
- Zur Sicherung der Wettbewerbsfähigkeit der Betriebe und Kapitalgesellschaften sollte aus den Kreditverbindlichkeiten keine Kostenbelastung entstehen
- Erarbeitung eines neuen Status der Treuhandanstalt sollte mit personellen Veränderungen verbunden werden
- Durch die Treuhandanstalt muß stärker darauf Einfluß genommen werden, daß die Reprivatisierung mit der Verbesserung der Wettbewerbsfähigkeit verbunden wird. (Bis zu Ausschreibung von Führungspositionen)
- Vorgesehene Inventuren erfordern reale Preisbasis
- Treuhandanstalt muß größeren Finanzspielraum erschließen und dazu Banken als Partner gewinnen

Im Verlauf der Diskussion wurde durch den Abgeordneten, Herrn Moyer-Bodemann, kritisiert, daß durch örtliche Organe LPG'n im Kreis Malchin aufgefordert wurden, im Prozeß der Erarbeitung der Eröffnungsbilanz per 30. 6. 1990, die gegenwärtige Anzahl der Arbeitskräfte bis zur Rentabilitätsgrenze zu reduzieren. Nur unter diesen Gesichtspunkten wird eine Bestätigung der Eröffnungsbilanz erfolgen.

- + Durch Herrn W. Krause erfolgt eine Prüfung und entsprechende schriftliche Information des Wirtschaftsausschusses bis zum 30. 5. 1990.
- T.

zu 4. Beratung des Beschlußvorschlages zu den überwiesenen Anträgen der Fraktionen zur Einsetzung eines Parlamentsausschusses zur Kontrolle der Treuhandanstalt

Im Ergebnis der Beratung des von den Berichterstattern vorgelegten Entwurfs eines Beschlußvorschlages wurde im Ausschuß einstimmig festgelegt:

Herr Bogisch arbeitet unter Berücksichtigung des vorliegenden Beschlußvorschlages, der Diskussion und der vorliegenden Standpunkte der mitberatenden Ausschüsse für Finanzen und für Recht einen Beschlußvorschlag bis zum

T. 28. 5. 1990 aus, der den Mitgliedern des Ausschusses bis
/ zum 29. 5. 1990 - 12.00 Uhr - zuzuleiten ist.

Herr Bogisch begründet den Beschlußvorschlag im Namen des Wirtschaftsausschusses in der Tagung der Volkskammer.

zu 5. Beratung der dem Wirtschaftsausschuß überwiesenen Gesetzentwürfe

- Drucksache Nr. 24

(Gesetz zum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vom 18. 5. 1990 vom)

Die Vertreter der Fraktionen - mit Ausnahme der Liberalen - gaben dazu kurze Stellungnahmen ab. Hauptbezugspunkte waren der Artikel 14 und die Anlage IX.

Übereinstimmend wurden folgende Festlegungen getroffen:

1. In der 5. Sitzung des Wirtschaftsausschusses am
T. 30. 5. 1990 erfolgt eine Beratung der Anlage IX.
Dazu werden von den Fraktionen PDS und CDU/DA bis
T. zum 28. 5. 1990 Vorlagen erarbeitet, die am
/ 29. 5. 1990 allen Mitgliedern des Ausschusses übergeben werden. Beide Fraktionen laden je einen Experten zu.
+ Vom Minister für Wirtschaft wird ebenfalls ein Experte delegiert.

2. In der 6. Sitzung des Wirtschaftsausschusses am
 T. 6. 6. 1990 erfolgt die Beratung des Artikel 14.
 Dazu werden von den Fraktionen Bündnis 90/Grüne
 T. und Die Liberalen bis zum 31. 5. 1990 Vorlagen erar-
 / beitet, die allen Mitgliedern des Ausschusses über-
 geben werden.
 Beide Fraktionen laden je einen Experten zu.
 + Vom Minister für Wirtschaft wird ebenfalls ein Ex-
 perte delegiert.
3. Am 30. 5. 1990 - 9.00 Uhr - findet im Konferenzraum 1. Geschoß
 T. 5, im Hause der Volkskammer eine gemeinsame Sitzung der
 Ausschüsse für Wirtschaft und Finanzen statt, in der
 der Minister für Finanzen, Herr Dr. Romborg, den vor-
 liegenden Gesetzentwurf (Drucksache Nr. 24) erläutert.
- Durch die Obleute der Fraktionen sind Fragestellungen
 zu Schwerpunktkomplexen vorzubereiten und in der Beratung
 T. der Obleute am 30. 5. 1990 - 8.00 Uhr - (Raum siehe oben)
 abzustimmen.

- Drucksache Nr. 19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fassung der DDR
 - Verfassungsgrundsätze - vom)

Durch die Vertreter der Fraktionen - mit Ausnahme der
 Liberalen - wurde eine kurze Stellungnahme abgegeben.
Übereinstimmend wurde folgende Festlegung getroffen:

- Die Beratung der überwiesenen Drucksache Nr. 19 erfolgt
 T. in der 5. Sitzung des Wirtschaftsausschusses am 30. 5. 1990.
 / Dazu wird ein Vertreter des Ausschusses für Verfassung und
 Verwaltungsreform eingeladen, mit der Bitte, die verfassungs-
 rechtlichen Auswirkungen dieses Gesetzentwurfes zu erläutern.

zu 6. Termine und Verschiedenes

- Eingabenbearbeitung

. Herr Nooke legte die Entwürfe zur Beantwortung der Eingaben Nr. 2/90 und 3/90 vor, die durch den Wirtschaftsausschuß einstimmig bestätigt wurden.

T. . Die Eingabe Nr. 1/90 wird am 30. 5. 1990 im Wirtschaftsausschuß behandelt.

T. . Herr Meier wurde beauftragt, in der nächsten Sitzung einen Vorschlag zur Klärung bzw. Beantwortung der übergebenen Eingabe Nr. 10/90 vorzuliegen.

- Organisatorisches

T. Es wurde übereinstimmend festgelegt, daß sich die Obleute der Fraktionen jeden Mittwoch um 8.00 Uhr zur Vorbereitung der Ausschußsitzung im jeweiligen Konferenzraum der Ausschußsitzung treffen.

- Verschiedenes

. Der Vorschlag von dänischen Abgeordneten, in der DDR eine gemeinsame Wirtschaftskonferenz vorzubereiten, wurde von den Mitgliedern des Wirtschaftsausschusses begrüß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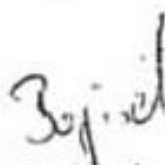
+ . Der Minister für Wirtschaft wurde beauftragt,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vorzubereiten und dem Wirtschaftsausschuß Ende Juni 1990 darüber zu informieren.

T. . Herr Nitsch informierte zusammengefaßt über die Parlamentarische Versammlung des Europarates vom 16.- 18.5.1990 in Budapest, an der 3 Abgeordnete des Wirtschaftsausschusses teilnahmen.

Das Referat des Herrn Dr. Tyll Necker ist dem Sitzungsprotokoll als Anlage 5 beigefügt.

- vorläufige Tagesordnung der 5. Sitzung des Wirtschaftsausschusses am 30. 5. 1990 - 9.00 Uhr - Konferenzraum 1 im 5. Geschoß des Hauses der Volkskammer
-

1. Gemeinsame Sitzung der Ausschüsse für Wirtschaft und Finanzen zum vorliegenden Gesetzentwurf Drucksache Nr. 24
2. Bekanntgabe und Bestätigung der Tagesordnung
3. Protokollbestätigung
4. Bestätigung des Beschlußvorschlages zu den überwiesenen Drucksachen Nr. 11 und Nr. 12 (Einsetzung eines Parlamentsausschusses zur Kontrolle der Treuhandanstalt)
5. Beratung der überwiesenen Drucksache Nr. 24 (Gesetz zum Vo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von)
6. Beratung der überwiesenen Drucksache Nr. 19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fassung)
7. Termine und Verschiedenes



Bogisch
Stellvertreter des
Vorsitzenden

Anlagen

Anwesenheitsliste

Ausschußtagung am 23. 5. 1990

Mitglieder:

1. Dr. Steinecke, Jochen	Die Liberalen	(Brüssel)
2. Zocher, Lothar	CDU/DA	(Wien)
3. Blume, Heinz	CDU/DA	anwesend
4. Creter, Klaus-Peter	CDU/DA	anwesend
5. Köhler, Hans-Ulrich	CDU/DA	
6. Mitsch, Johannes	CDU/DA	anwesend
7. Rother, Heinz	CDU/DA	
8. Dr. Schiffner, Eberhard	CDU/DA	anwesend
9. Schulz, Gerhard	CDU/DA	anwesend
10. Dr. Möbus, Walter	CDU/DA	anwesend
11. Bogisch, Frank	SPD	anwesend
12. Dr. Förster, Alfred	SPD	
13. Lippmann, Friedor	SPD	
14. Dr. Ringstorff, Harald	SPD	
15. Meier, Lothar	PDS	anwesend
16. Dr. Richter, Herbert	PDS	anwesend
17. Prof. Dr. Steinitz, Klaus	PDS	anwesend
18. Nowack, Joachim Hubertus	DSU	
19. Dr. Meyer-Bodemann, Werner	DBD/DFD	anwesend
20. Nooke, Günther	Bündnis 90/ Grüne	anwesend
21. Dr. Klein, Thomas	Vereinigte Linke	anwesend

Gäste:

1. Thiemann, Hanno	Sekretariat Wirtschafts- ausschuß des Bundestages
2. Krause, Wolfram	Direktor Treuhandanstalt
3. Scheuner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Parlamentarischer Referent
4. Kotschi, Reinhard	Fraktionsmitarbeiter PDS

5. Reichmann, Horst
6. Michael, Werner
7. Pflerschinger, Wolfgang
8. Dr. Gerhardt, Gerd

Fraktionsmitarbeiter DSU
Fraktionsmitarbeiter DBD/DFD
Fraktionsmitarbeiter Liberale
Fraktionsmitarbeiter Bündnis 90/
Grüne

Sekretär:

Bretzke, Bodo

25. 5. 1990

Zu den Ausführungen von Herrn Wolfram Krause zu
Fragen der Treuhandanstalt in der Sitzung des
Wirtschaftsausschusses der Volkskammer am 23. 5. 1990

Herr Krause machte Ausführungen zu folgenden Fragen und nannte
Zahlen.

1. Zum Stand der Umwandlung der Betriebe und Einrichtungen
in Kapitalgesellschaften
Gesamtzahl per 22. 5. in Kapitalgesellschaften
umgewandelte Betriebe: 273 GmbH
dar. 105 in den territorialen Außenstellen

Damit wurde eine deutliche Beschleunigung des Umwandlungs-
prozesses erreicht, da per 30. 4. erst 76 Umwandlungen
erfolgten.

Vorliegende und in Bearbeitung befindliche Anträge auf
Umwandlung: 588, dar. 344 Anträge in den territorialen
Außenstellen.

Vorrangig durchgeführt werden sogenannte Einzelgründungen,
d.h. Umwandlungen bisheriger Kombinatbetriebe in GmbH und
ihr Ausscheiden aus den bisherigen Kombinatverbund
(Entflechtungen).

2. Zum Stand der Erfassung des Vermögens von Volkseigentum

Der Stand der Vermögenserfassung auf Basis der Ab-
schlußbilanzen per 31. 12. 1989 (ohne Grund und Boden)
weist ein Vermögen (Anlage- und Umlaufvermögen abzüglich
Rückstellungen und Verbindlichkeiten) von 914,5 Milliarden
Mark in der Volkswirtschaft aus.

Dafür liegen detaillierte Untersuchungen nach Verantwortungsbereichen und Industriezweigen vor.

Noch nicht enthalten sind Vermögenswerte solcher Bereiche wie Inneres, Verteidigung, Zollverwaltung, Staatsreserve, Wismut, Amt für Atomsicherheit u.a., die die Treuhandanstalt bisher nicht zugänglich sind.

3. Zur Einschätzung der Rentabilitätslage von 2200 Betrieben mit Stand Mitte Mai 1990

Nach den Berechnungen und den noch unvollkommenen Erkenntnisstand in bezug auf neu unternehmerische Konzepte wurden folgende Aussagen getroffen (präzisierte Fassung):

- 683 Unternehmen (31 %) wären auch nach der DM-Umstellung rentabel und würden ohne Fördermittel auskommen,
- 920 Unternehmen (rd. 42 %) würden mit Verlust arbeiten, sind aber sanierungsfähig,
- 597 Unternehmen (rd. 27 %) sind konkursgefährdet.

Bei Überlagerung der ausgewiesenen Überschüsse bzw. Verluste auf alle Betriebe würde für den Staatshaushalt im 2. Halbjahr 1990 rd. 40 Milliarden DM Belastungen entstehen.

4. Zum Ablauf der Arbeiten an der DM-Eröffnungsbilanz

Mit der Einführung der DM ist zu diesem Stichtag eine Eröffnungsbilanz zu errichten.

Da die handelsrechtlichen Vorschriften der BRD als kürzeste Frist drei Monate vorschreibt, stehen aber ab Einführung der DM entsprechende Fristen zur Verfügung, die notwendig sind.

Erforderlich sind gesetzliche Regelungen zu den Bewertungsgrundsätzen, wofür der Staatsvertrag eine Frist von drei Monaten ab Inkrafttreten vorsieht. Erst danach kann eine entsprechende Bewertung erfolgen. An Bewertungsgrundsätzen (einschl. Grund und Boden) wird in dem zuständigen Ministerium für Finanzen und Wirtschaft unter Mitwirkung der Treuhandaanstalt intensiv gearbeitet.

Berlin, 21. 5. 1990

68

Zur Information für die Volkskammerabgeordneten im Wirtschaftsausschuß der Volkskammer
betr. Rentabilitätseinschätzungen der Betriebe auf DM-Basis

Für eine erste Einschätzung der Rentabilitätslage der Betriebe zum Zeitpunkt des Wirksamwerdens der Währungsunion wurden in Abstimmung zwischen dem Ministerium der Finanzen, de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sowie der Treuhandanstalt in 2 200 Betrieben der bisher zentralgeleiteten Wirtschaft Rentabilitätseinschätzungen vorgenommen. Sie dienen dazu, Aussagen über die Rentabilitätslage der Betriebe als in kurzer Frist wettbewerbsfähig, oder erst nach einer Sanierungsphase, bzw. bereits konkursgefährdet zu ermitteln.

Sie stellen keine exakten Ertragsbewertungen dar, da weder eine eindeutige Kostenbewertung nach DM-Kalkulation noch eine eindeutige Erlösbewertung nach aktuellen Weltmarktpreisen derzeit möglich sind.

Sie ermöglichen jedoch, die Betriebe bereits auf solche Bewertungen einzustellen, die mit ihrer Geschäftstätigkeit nach dem 2. 7. 1990 sowie in Vorbereitung von DM-Eröffnungsbilanzen notwendig sind.

Die Richtlinie des Ministeriums der Finanzen, die diesen Rentabilitätseinschätzungen zugrunde gelegt wurde, erhalten Sie anliegend zur Kenntnis.

Mit den ermittelten Angaben aus den 2 200 Betrieben wird gegenwärtig in den Ministerien gearbeitet.

Anlage

Mit dem Wirksamwerden einer Währungsunion und Wirtschaftsgemeinschaft, einschließlich eines Sozialverbundes,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sowie der Einführung der DM als einheitliche Währung entsteht eine neue Lage für die Wirtschafts- und Finanzbeziehungen der Kombinate und Betriebe. Die marktwirtschaftlichen Bedingungen erfordern von jedem Unternehmen eine gründliche Überprüfung seiner ökonomischen Verhältnisse und zur Sicherung der Rentabilität eine Unternehmensstrategie, die auf die Gestaltung einer modernen absatzfähigen Produktion, die Rationalisierung der Fertigungsprozesse und die internationale Konkurrenzfähigkeit gerichtet ist.

Damit muß erreicht werden, daß aus eigenen Anstrengungen heraus auch unter den künftigen Bedingungen und der DM als einheitliche Währung eine hohe Wirtschaftlichkeit gewährleistet wird.

In den Fällen, wo aus eigener Kraft keine ausreichenden Gewinne erwirtschaftet werden können, muß über mittelfristig bzw. längerfristig angelegte Sanierungsmaßnahmen die Rentabilität wieder erreicht werden. Das kann durch Vereinbarungen zur Produktionskooperation, wissenschaftlich-technischen Zusammenarbeit (know how) sowie die Kapitalbeteiligung von Firmen der BRD und anderer Länder und/oder durch ein zeitlich begrenztes Sanierungskonzept einschließlich minimierter, aus künftigen Gewinnen zurückzuzahlender Förderungsmaßnahmen erfolgen.

Für die Beurteilung der Effizienz der Unternehmen sowie der zur Sanierung notwendigen Aufwendungen bzw. notwendigen Finanzierung von Verlusten sind die nachstehenden Aussagen über die Berechnung zur Rentabilitätslage, verbunden mit der Darlegung des Konzepts für die Rückzahlung der zur Wirtschaftsförderung angestrebten staatlichen Mittel, erforderlich.

Soweit zutreffend, ist das mit Vorschlägen zur regionalen Wirtschaftsförderung zu verbinden.

Die den nachfolgenden Rentabilitätsberechnungen zugrunde zu legenden Vermögenswerte und Schulden in DM gelten ausschließlich für diese Berechnungen. Sie gelten nicht für eine Eröffnungsbilanz in DM.

Unternehmen/Betrieb.....

Fernamt:

Telefon:

Bearbeiter:

Berechnung zur Rentabilitätslage:

Lfd. Nr.	Kennziffer	II. Halbjahr 1990		Voreinschätzung 1991	
		Mio M	Mio DM	Mio M	Mio DM
I	<u>Umsatz/Ergebnisrechnung:</u>				
1	Umsatzerlöse				
2	Materialaufwand				
3	Personalaufwand				
4	Abschreibungen				
5	sonstiges Ergebnis				
6	Finanzergebnis				
7	Steuern	-		-	
8	Überschuß +				
	Fehlbetrag -	-		-	
II	<u>Vorschläge zur Sicherung der Rentabilität:</u>				
1	erforderliches Investkapital zur Sanierung				
2	Förderungsmaßnahmen aus dem Haushalt für Produktion, Export				
Lfd. Nr.	Kennziffer	Stand		voraussichtlicher Stand 1991	
		per 30.6.90	per 31.12.90		
	Anzahl der Arbeitskräfte (Personen)				

Unternehmen/Betrieb.....

71

Fernamt:

Telefon:

Bearbeiter:

Einschätzung qualitativer Faktoren

1. Veränderung der Produktionsstruktur zur Sicherung der Absatzfähigkeit und Rentabilität einschließlich der Sicherung langfristiger Exportverpflichtungen

2. Modernisierung und Rationalisierung technologischer Prozesse

Unternehmen/Betrieb.....

72

Einschätzung qualitativer Faktoren

3. Schwerpunkte zur Schaffung neuer Kapazitäten und zum Einsatz von freigesetzten Arbeitskräften

4. Stand der Zusammenarbeit mit ausländischen Unternehmen

Erforderliche finanzielle Mittel aus den Punkten 1 bis 3

Jahr	Kapitalbeteiligung		zeitweilige Fördermittel
	ausländisch in Mio DM	DOR in MioDM	in Mio DM
1990 2. Halbjahr			
1991			
1992			
1993			
und folgende Jahre			

Erläuterungen zu den Berechnungen (für den Bereich der Industrie)

I. Die Kennziffernübersicht ist auf der Grundlage einer Gewinn- und Verlustrechnung gemäß Handelsgesetzbuch (HGB) der BRD zu erarbeiten. Empfohlen wird, dafür das Gesamtkostenverfahren anzuwenden. Die Hinweise auf Positionen bei den nachfolgenden Kennziffern beziehen sich auf die entsprechenden Positionen des § 275 (2) HGB.

	<u>Definition lt. DDR-Methodik</u>	<u>Definition lt. HGB der BRD</u>
zu lfd. Nr. 1	ÜP-Kennziffer 0501	Pos. 1 gem. § 275 (2) § 277 (1)
zu lfd. Nr. 2	ÜP-Kennziffer 0102 + 0162	Pos. 5 gem. § 275 (2)
zu lfd. Nr. 3	Kontengruppe 340-346, 35, 386, 387	Pos. 6 gem. § 275 (2)
zu lfd. Nr. 4	siehe Erläuterungen	Pos. 7 gem. § 275 (2)
zu lfd. Nr. 5	Ergebnis außerhalb der realis. Warenproduktion + ÜP-Kennziffer 0198 + übrige nicht in den laufenden Nr. 2-4 erfaßte Selbstkosten (einschließlich Kosten für Wissenschaft und Technik ohne Produktionsfondsabgabe/Handelsfondsabgabe) + ÜP-Kennziffer 0150	
zu lfd. Nr. 6	ÜP-Kennziffer 0105 - 0107	Pos. 14 gem. § 275 (2)
zu lfd. Nr. 7	-	siehe gesonderte Erläuterung
zu lfd. Nr. 8	-	lfd.Nr. 6 minus lfd.Nr. 7

II. Hinweise zur Berechnung der Rentabilitätslage

74

Zu laufenden Nr. 1 und 2 (Umsatzerlöse und Materialaufwand)

Für die Bestimmung des Umsatzes an Erzeugnissen und Leistungen sowie des Materialaufwandes in DM sind die Preise für den BRD-Binnenmarkt (ohne Mehrwertsteuer) bzw. die Weltmarktpreise zugrunde zu legen.

Generell entfallen bei der Berechnung des Umsatzes in DM produktgebundene Preisstützungen, produktgebundene Abgaben und staatliche Erlöszuschläge, ebenso sind Export- und Verluststützungen in die Berechnungen auf DM-Basis nicht einzubeziehen. Preisstützungen sind nur insoweit in die Berechnung von Umsatz und Ergebnis einzubeziehen, wie sie in der BRD für vergleichbare Erzeugnisse gewährt werden.

Als Näherungswerte für die Umbewertung der Umsatzerlöse kann die Devisenertragskennziffer NSW zugrunde gelegt werden (ÜP-Kennziffer 1405 : 1415).

Als Näherungswerte für die Materialaufwendungen können für den Teil, für den keine BRD- bzw. Weltmarktpreise verfügbar sind,

- in der Grundstoffindustrie die DDR- Preise (1 : 1)
- in der verarbeitenden Industrie die durchschnittlichen Importkoeffizienten (ÜP-Kennziffer 1555 : 1575) * DDR-Preis zugrunde gelegt werden.

Zu laufenden Nr. 3 (Personalaufwand)

Die Personalaufwendungen in DM sind ausgehend vom bisher 1990 gezahlten Durchschnittslohn und betrieblichen Anteil an Sozialversicherungsbeiträgen einschließlich Unfallumlage zu bestimmen, berechnet für die vom Unternehmen gemäß seiner Rationalisierungskonzeption vorgesehene Anzahl an Arbeitskräften. Zuführungen zum Prämienfonds sind in Höhe des 1990 geplanten Prämiengrundbetrages sowie Ausgleichszahlungen für den Subventionsabbau und Aufwendungen für die Erhöhung der Sozialleistungen in Höhe des Schätzwertes von 40 % des bisherigen Durchschnittslohnes den Personalaufwendungen¹⁾ in DM hinzuzurechnen.

Der Beitrag für gesellschaftliche Fonds ist aus den Kosten herauszunehmen.

Zur laufenden Nr. 4

Zur Berechnung der Abschreibungskosten eines Jahres in DM sind folgende Rechenschritte durchzuführen:

a) Ausgangswerte

		Gebäude/ Baulichkeiten netto	Ausrüstungen netto
1. Anlagevermögen lt. Bilanz 31.12.89 (Fbl. Anlagen 204/1, Kz. 700	M		
2. + Zugänge/Abgänge 1.1.-30.6.1990	M		
3. Anlagevermögen per 30.6.90	M		
4. ././ Importausrüstungen NSW	M	_____	_____
5. Anlagevermögen ohne Import- ausrüstungen NSW	M		
6. Anlagevermögen gemäß Zeile 5, geteilt durch 2	DM		
7. + Importausrüstungen NSW, bewertet zu DM-Preisen	DM	_____	_____
8. = Anlagevermögen (ohne Grund und Böden)	DM	=====	=====

b) Berechnung der Abschreibungskosten in DM

Auf die Werte gemäß a) 8 sind die Abschreibungssätze in Anlehnung an die AFA-Tabelle der BRD zu berechnen. Sonderabschreibungen sind z. B. möglich für

- Stilllegung infolge Umweltschutz
- Veränderung Produktionsprofil
- Entflechtung der Kombinate
- beschleunigte technologische Erneuerung

Zur laufenden Nr. 5 (sonstiges Ergebnis)

Das sonstige Ergebnis in M der DDR ist grundsätzlich 1 : 1 in DM umzurechnen. Bei einem hohen Anteil der Zinskosten ist für die Ermittlung der Zinskosten in überschlägigen Berechnungen von einer Erhöhung des Grundzinssatzes für Grund- und Umlaufmittelkredite auf 9 % auszugehen. Sollten Kreditaufnahmen im Ausland in die Berechnungen einbezogen werden, sind die dort festgelegten Zinssätze anzuwenden.

Zur laufenden Nr. 6 (Finanzergebnis)

Ermittlung des Finanzergebnisses in DM

Umsatzerlöse in DM
- Materialaufwand in DM
- Personalaufwand in DM
- Abschreibungen in DM
- sonstiges Ergebnis in DM
= Finanzergebnis in DM

Hinweise für die überschlägige Ermittlung der in der Gewinn- und Verlustrechnung zu berücksichtigenden Steuern

7.1. Die Umsatzerlöse und die Materialaufwendungen sind ohne Mehrwertsteuer ausgewiesen. Damit ist die Mehrwertsteuer in der Gewinn- und Verlustrechnung eliminiert.

7.2. Vom Finanzergebnis sind abzusetzen

- Verbrauchsteuern
- Steuern vom Vermögen
 - Vermögenssteuer
 - Gewerbekapitalsteuer
- Steuern vom Einkommen und vom Ertrag
 - Gewerbeertragsteuer
 - Körperschaftsteuer

7.3. Anzuwenden sind die in der BRD für Kapitalgesellschaften geltenden Steuersätze.

Die näherungsweise Berechnung der Steuerschuld kann wie folgt durchgeführt werden:

- Vermögenssteuer und Gewerbekapitalsteuer
Produktive Fonds ohne Grund und Boden in DM
(Anlagevermögen /netto/ +
Umlaufvermögen in Mark, geteilt : 2 = DM)
- Verbindlichkeiten, Kredite, Fonds
(außer Grund- und Umlaufmittelfonds) in M, geteilt : 2 = DM
- = Vermögen für Besteuerung in DM
 - Vermögenssteuer: 0,6 % auf Vermögen für Besteuerungen
 - Gewerbekapitalsteuer: 2 v.H. x 4,0 Vermögen für Besteuerung
- Gewerbeertragsteuer
5 % x 4,0 auf
Finanzergebnis nach Verbrauchs-, Vermögen-, Gewerbekapitalsteuern
- Körperschaftsteuer
50 % auf
Finanzergebnis nach Verbrauchs-, Vermögen-, Gewerbekapital- und Gewerbeertragssteuern.

Ermittlung des Jahresüberschuß bzw. Jahresfehlbetrag

Finanzergebnis	in DM
- Steuern	in DM
<hr/>	
= Überschuß (+)	Fehlbetrag (./.) in DM

Zur laufenden Nr. II/1 (Investkapital)

Das erforderliche Investkapital zur Sicherung der effektiven Produktion unter marktwirtschaftlichen Bedingungen ergibt sich aus den erforderlichen Aufwendungen zur Kapitalbeteiligung der Ausländischen und der DDR entsprechend dem Formblatt zur Einschätzung der qualitativen Faktoren.

Zur laufenden Nr. II/2 (Fördermaßnahmen)

Unter zeitweiligen und wiederzuerwirtschaftenden Fördermaßnahmen sind Zuwendungen aus dem Haushalt auszuweisen, die zur Sicherung der im Formblatt zur Einschätzung der qualitativen Faktoren genannten Aufgaben erforderlich sind.

1)	Lohnnebenkosten BRD	Lohnnebenkosten DDR
	betriebliche Sozialleistungen	Beitrag für SV (Betriebsante
	betriebliche Pensionen	zusätzliche Altersversorgung
	übertarifliche Leistungen	(Betrieb)
	Ausbildungsleistungen	Entschädigungen, Zuwendungen
	der Betriebe	Teil der Zuführungen zum
	Wegegeld	K.-u.S-Fonds und zum
		Leistungsfonds

Hinweise für Abschreibungen

Für die Abschreibungen dient die beiliegende Anlage. Die darin enthaltenen Nutzungsdauern (ND) und Abschreibungssätze wurden abgeleitet aus den AFA-Tabellen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der BRD, herausgegeben 1989 (AFA = Absetzung für Abnutzung).

Die ausgewiesenen Positionen mit ihren ND und Abschreibungssätzen stellen eine hochaggregierte Zusammenfassung der AFA-Tabellen dar. Die Bezeichnung der Positionen wurde in Anlehnung an die "Nomenklatur und Verzeichnis der Abschreibungssätze für Grundmittel" (GBl. Sonderdruck 1124) gewählt.

Bei der Anwendung der Tabellen ist zu beachten:

- Die ausgewiesenen durchschnittlichen ND und Abschreibungssätze sind ggf. entsprechend den spezifischen Reproduktionsbedingungen abzuwandeln. Die ausgewiesenen Abschreibungssätze beruhen auf einer einschichtigen Nutzung der Grundmittel. Bei einer Nutzung der Grundmittel im Zweischicht-Betrieb können die Abschreibungssätze um 25 % und im Dreischicht-Betrieb um 50 % erhöht werden.
- Sofern vorhandene Grundmittel nicht in die vorliegenden Tabellen eingeordnet werden können wird empfohlen, den Abschreibungssatz entsprechend der eingeschätzten ND zu ermitteln.
- Für die in den Tabellen genannten ND ist der entsprechende lineare Abschreibungssatz angegeben. Sonderabschreibungen können entsprechend § 7 der DB vom 16. 3. 1990 zum Steueränderungsgesetz vorgenommen werden (GBl. I Nr. 21 vom 30. 3. 1990, S. 195).
- Gegenwärtig voll abgeschrieben Grundmittel, deren Nutzung unter den gegebenen Bedingungen noch möglich und ökonomisch vertretbar ist, sind mit maximal 15 % des ursprünglichen Bruttowertes neu zu bewerten und entsprechend der eingeschätzten Restnutzungsdauer abzuschreiben.

Abschreibungssätze nach AfA

I. Maschinen und Ausrüstungen

	ND in Jahren	Linearer AfA-Satz (einschichtig) - % -
- Anlagen der Tier- und Pflanzenproduktion einschl. Forstwirtschaft	10	10
- Hochsee-, Küsten- und Binnenfischerei	15	7
- Maschinen und Anlagen zur Stromerzeugung - Fortleitung	20	5
- Maschinen und Anlagen für den Bergbau	10	10
- Maschinen und Anlagen der chemischen Industrie	10	10
- Maschinen und Anlagen für die Baustoffindustrie	8	12
- Maschinen und Anlagen für die Glas-erzeugende Industrie	10	10
- Maschinen und Anlagen für die NE-Halbzeugindustrie	8	12
- Maschinen und Anlagen der metallverarbeitenden Industrie	8	12
- Maschinen und Anlagen der Kraftfahrzeugindustrie	10	10
- Schiffbau	15	7
- Maschinen und Anlagen der Holzverarbeitenden Industrie	8	12
- Druckereien	8	12
- Maschinen und Anlagen der Fe-Be-Le-Industrie	8	12
- Maschinen und Anlagen der Nahrungs- und Genussmittelindustrie	8	12
- Maschinen und Anlagen des Baugewerbes	8	12
- Einrichtungen für Waren- und Kaufhäuser	7	14
- Seil- und Schwebbahnen und Sesselhilfe	12	8
- Hochsee-, Binnen- und Küstenschifffahrt	16	6
- Maschinen und Anlagen für Dienstleistungen	8	12
- Maschinen, Anlagen und Ausrüstungen für Kultur, Sport und Gesundheitswesen	7	14

	MD in Jahren	Linearer AfA-Satz (einschichtig)
<u>II. Sonstige Ausrüstungen</u>		
- Motore	8	12
- Transportanlagen (Aufzüge, Krananlagen u.ä.)	10	10
- Schienenfahrzeuge	20	5
- Straßenfahrzeuge	5	20
- Flugzeuge	10	10
- Hubschrauber	5	20
- Beleuchtungsanlagen	8	12
- Be- und Entlüftung, Klimatechnik	5	12
- Fahrwerke, Brücken- und Waggonwagen	20	5
- Raumheizungsanlagen	10	10
- Waschanlagen für Fahrzeuge	8	12
- Werkstätten, Laborausstattungen und Lagereinrichtungen	10	10
- Ausstattungen für Belegschaftsbetreuung und für Werksicherheit	8	12
- Büromaschinen und Organisationsmittel einschl. EDV-Anlagen	5	20
- Büroeinrichtungen	10	10
<u>III. Gebäude und bauliche Anlagen</u>		
- Betriebsgebäude	50	2
- Gleisanlagen	32	3,13
- Maschinenhäuser	40	2,5
- Kühltürme	25	4
- Tankanlagen	20	5
- Bürogebäude	40	2,5
- Baracken (massiv)	10	10
- Baracken (Holz)	5	20
- Backöfen	20	5
- Straßen- und Wegebrücken aus Stahl und Beton	33	3
und aus Holz	15	7
- Bewässerungs-, Entwässerungs- und Kläranlagen	20	5
- Umzäunungen	10	10
- Schornsteine, Mauerwerk	33	3
Schornsteine, Blech	10	10
- Silobauten, Beton, Stahl	33	3
Silobauten, Mauerwerk	20	5

Berlin, 21. 5. 1990

82

Zur Information für die Volkskammerabgeordneten im Wirtschaftsausschuß der Volkskammer
betr. DM-Eröffnungsbilanzen

Entsprechend der Zusage des Ministers für Wirtschaft, Herrn Dr. Pohl, in der Beratung des Volkskammerausschusses am 16. 5. 1990, den Abgeordneten eine Richtlinie zur DM-Eröffnungsbilanz der Betriebe zu übergeben, wird wie folgt informiert:

1. DM-Eröffnungsbilanzen sind für alle Betriebe der DDR im Verlaufe des 2. Halbjahres 1990 aufzustellen.
Dafür ist entsprechend den Festlegungen im Staatsvertrag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Wirksamwerden der Währungsunion durch die Volkskammer ein "Gesetz zur DM-Eröffnungsbilanz" (Bilanzgesetz) zu beschließen. Auf der Grundlage dieses Gesetzes werden dann (mit dem Stichtag 2. 7. 1990) durch alle Betriebe Eröffnungsbilanzen auszuarbeiten und durch unabhängige Wirtschaftsprüfer zu prüfen sein. Dafür schreibt der Gesetzgeber einen Zeitraum von 6 Monaten vor, so daß dies bis 31. 12. 1990 vollzogen werden kann.
(Der Entwurf für ein Gesetz zur DM-Eröffnungsbilanz ist derzeit in einer ersten Abstimmung zwischen den zuständigen Ministerien.)
2. Zwischenzeitlich - bis zur endgültigen Vorlage der DM-Eröffnungsbilanzen - wird im August durch alle Betriebe eine vorläufige DM-Eröffnungsbilanz aufzustellen sein, um
 - eine Grundlage für betriebswirtschaftliche Arbeit in den Unternehmen zu haben;
 - gegenüber den Banken Vermögenslage und Kreditwürdigkeit ausweisen zu können.

Dazu soll ein vorläufiges Bewertungsverfahren vorbereitet und in Kraft gesetzt werden.

3. Die Aufstellung der DM-Eröffnungsbilanzen setzt neben dem genannten Gesetz außerdem voraus, daß durch das Ministerium der Finanzen eine einheitliche und verbindliche Richtlinie für die Wertermittlung in Wirtschaftsunternehmen herausgegeben wird.

Dazu wurde zwischen dem Ministerium der Finanzen und der KPNG Deutsche Treuhand-Gesellschaft ein Auftrag vereinbart, um eine solche Bewertungsrichtlinie vorzubereiten. Die Treuhand-Gesellschaft arbeitet mit Fachleuten der DDR zusammen und bereitet den Entwurf für eine Bewertungsrichtlinie anhand von Bewertungen in vier Kombinaten der DDR vor.

Der Richtlinienvorschlag soll dem Auftraggeber spätestens Anfang bis Mitte Juni zur Verfügung stehen.

Anliegend werden Beispiele über die vorläufigen Ergebnisse der Vermögensbewertung in drei der untersuchten Kombinate zur Kenntnis gegeben.

Anlagen

Berlin, 4. 5. 1990

54

Beispiel 1

Information

über die vorläufigen Ergebnisse der Vermögensbewertung im
Kombinat Germed (Stambetrieb Radeboul)

Bisherige Bewertungsergebnisse (ohne Grund und Boden)

1. Ergebnisse nach der Substanzbewertung

Der Substanzwert wurde als Teilreproduktionswert ermittelt.
Dabei wurde von dem per 31. 12. 1989 staatlich bestätigten
Bilanzwert in Höhe von

2.068,7 Mio M

ausgegangen.

Die Neubewertung nach den handelsrechtlichen Bestimmungen
der BRD ergab folgende Neubewertung:

	Mio M	Mio DM	Koeff. M : DM
Substanzwert insgesamt	1.313,3	410,6	3,2:1
dar.: Grundmittel (Nettowert)	730,8	112,0	6,5:1
Material	126,3	43,0	2,9:1
unfertige Erzeug- nisse	112,0	51,4	2,2:1
Fertigerzeugnisse	25,8	19,7	1,3:1
Forderungen	173,7	58,0	3,0:1
Bankguthaben und Zahlungsmittel	87,5	22,4	3,9:1
(unfert.wiss.-techn. Leistungen	188,2	0	-)*
Abrechnungs- und Abgrenzungskonten	58,0	0,3	166,7:1
(Nettogewinnverwendung	517,4	0	-)*

*Lt. handelsrechtlichen Bestimmungen der BRD nicht zu akti-
vieren.

Anmerkungen:

1. Das Verhältnis M/DM von 3,2 : 1 ist das Ergebnis des Wirkens unterschiedlicher Faktoren und Unterstellungen.
2. Die Differenz bei Grundmitteln ist wesentlich bestimmt durch:
 - einen hohen Anteil importierter Grundmittel aus dem NSW. Sie wurden mit einem Richtungskoeffizienten von 4,4 aktiviert, der bei der Neubewertung entfällt.
 - die Neubewertung der Grundmittel auf der Grundlage der Abschreibungstabellen.

3. Die Differenz bei Material ergibt sich

- aus dem Wegfall des Richtungskoeffizienten 4,4 bei der Neubewertung des importierten Materials und
- dem höheren nationalen Preisniveau von Materialien.

Das Material wurde wie folgt bewertet:

- 33 % durch direkte Übertragung der Einzelpreise
- 51 % mittels Einzelkoeffizienten
- 16 % mittels Durchschnittskoeffizienten

Die Koeffizienten wurden vom MdF erarbeitet und übergeben.

4. Die Differenz bei unfertigen Erzeugnissen ergibt sich aus den niedrigen Materialkosten zu DM. Die Bewertung erfolgte:

Materialkosten DM + Lohnkosten (1:1) + Gemeinkosten (1:1)
5. Die Fertigerzeugnisse wurden mittels einer Rückbewertung in DM ausgedrückt. Dabei wird von den Preisen der sogenannten "Roten Liste" für Arzneimittel, die Angaben über DM-Preise enthält, ausgegangen:

BP lt. "Roter Liste" ./ . Gewinn ./ . Absatzkosten

Erzeugnisse, die nicht in der "Roten Liste" enthalten sind, wurden in Relation zu vergleichbaren DM-Preisen bewertet.

Als Faktor wurde 0,34 errechnet. Also BP x 0,34.

80 % der DDR-Arzneimittel sind in der "Roten Liste" enthalten.

6. Bei Forderungen wurde ein Kursverhältnis von 3 : 1 unterstellt.

2. Ergebnisse nach dem Ertragswertverfahren

Es wurden folgende Ertragswerte (jeweils in Mio M und Mio DM) ermittelt:

<u>Mio M</u>	<u>Mio DM</u>	<u>Koeff. M : DM</u>
441,-	27,-	16,3 : 1

Anmerkungen:

1. Der ermittelte Ertragswert basiert auf eine Vielzahl von Ungewißheiten, so daß seine Höhe weder von der DTG noch vom Kombinat vertreten wird.
2. Bei der Ermittlung wurde u. a. berücksichtigt
 - der vertraglich abgesicherte Exportanteil mit der UdSSR (ca. 30 % des Produktionsvolumens) sowie
 - die Kaufbereitschaft der UdSSR unter DM-Bedingungen.
3. Nicht berücksichtigt wurden z. B. die Einstellung der Produktion von Substanzen (ausgelöst durch Green-peace-Aktionen), als unabdingbare Voraussetzung für die Fertigprodukte und deren Exporte. Nicht berücksichtigt wurde auch nicht, die sich aus dieser Produktionseinstellung ergebende Entlastung von 50 % der Belegschaft (ca. 1.500).

Beispiel 2Zwischenauswertung der Unternehmensbewertung

Im VEB Förderanlagen "7. Oktober" Magdeburg ist die Bewertung des Vermögens und die Gewinn- bzw. Verlustrechnung auf DM-Basis noch nicht abgeschlossen. Nach derzeitigem groben Überblick ergibt sich folgendes Bild:

1. Vermögensbewertung

Die materiellen Vermögenswerte (Grundmittel, Material, unfertige und fertige Erzeugnisse) müssen von 208 Mio M auf ca. 113 Mio DM abgewertet werden. Das entspricht einem Abwertungskoeffizienten von 0,55 bzw. einem Kursverhältnis von 1 : 1,8.

Für die einzelnen Vermögenspositionen sind die Abwertungen differenziert. Sie betragen bei

	Werte M	Werte DM	Koeffizient
Grundmitteln insgesamt	134	65	0,49
davon: Gebäude	74	42	0,57
Ausrüstungen	60	23	0,38
Umlaufmitteln insgesamt	73,7	48,4	0,66
davon: Material	29,7	19,9	0,67
unfertige Erzeugn.	40,6	26,1	0,64
fertige Erzeugn.	3,4	2,4	0,71

Die starke Abwertung der Ausrüstungen hängt damit zusammen, daß bei den Berechnungen die untere Grenze der DM-Werte angesetzt wurde. Zum Beispiel wurden Werkzeugmaschinen mit 0,3 abgewertet.

Zwischenzeitlich vorliegende Berechnungen ergaben bei vielen Werkzeugmaschinen ein Verhältnis von 0,5. Betriebs- und Büroausstattungen wurden mit 0,3 abgewertet. Neuere Berechnungen ergaben 0,6.

Außerdem spielt die Korrektur der Nutzungsdauer entsprechend Abschreibungs-Tabelle eine Rolle. Die Nutzungsdauer wurde mit dem Faktor 0,8 reduziert.

In diesem Betrieb haben NSW-Ausrüstungsimporte keine große Bedeutung. Sie betragen nur 7,7 Mio M = 13 % der Ausrüstungen insgesamt. Sie wurden mit einem Faktor von 0,23 abgewertet.

2. Gewinn- bzw. Verlustrechnung

Die Einschätzung der zukünftigen Ertragslage ist sehr schwierig. Es konnten bis jetzt nur Überschlagsrechnungen durchgeführt werden.

Der Umsatz betrug 1989 397 Mio M und wird voraussichtlich auch 1990 diese Höhe erreichen.

Der Absatz der Hauptproduktion (Förderanlagen und Krone) ist durch Verträge mit der UdSSR gesichert. Problematisch ist der weitere Absatz der Abgasanlagen für Wartburg 1.3, Trabant 1.1 und Barkas mit ca. 12 Mio M. Verträge liegen noch nicht vor. Es wurde von den vorgeschlagenen Produktionsstückzahlen für die PKW ausgegangen. Andere Absatzmöglichkeiten für Abgasanlagen werden noch geprüft.

In DM würde der Umsatz 255 Mio betragen. Das entspricht einem Umrechnungskoeffizienten von 0,68.

Die Kosten betragen 342 Mio M, so daß in Mark der DDR ein Gewinn möglich wäre.

Bei Umrechnung auf DM würde kein Gewinn mehr erwirtschaftet werden. Dabei wurden die Löhne 1 : 1 belassen, während alle anderen Kosten mit differenzierten Koeffizienten umgerechnet wurden. Die Kosten sind zu hoch, weil die bisherigen Maßnahmen zur Kosteneinsparung nicht ausreichen.

Der Betrieb hat gegenwärtig 1 995 VbE. Davon sollen 50 Verwaltungsangestellte eingespart werden. Das reicht nicht aus, um die Kosten auf das in der BRD übliche Niveau zu senken. Ein Vergleich mit entsprechenden BRD-Betrieben zeigt, daß im Betrieb insbesondere die Materialkosten trotz Abwertung zu hoch sind und die Arbeitsproduktivität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zu niedrig. Während die Kennziffer Umsatz je Produktionsarbeiter dem BRD-Niveau noch entspricht, liegt der Umsatz je Arbeiter und Angestellten erheblich niedriger.

Berlin, 7. 5. 1990

Beispiel 3Zwischenauswertung der Unternehmensbewertung im VEB Feinstrumpfwerke "Esda" Thalheim1. Zur Substanzwertermittlung

Durch die Umstellung auf DM-Preise ergeben sich für wichtige Vermögensbestandteile in etwa folgende Veränderungen:

	Mio M	Mio DM	Kursverhältnis M : DM
Produktionsausrüstungen und Arbeitsmaschinen (Bruttowert)	230	124	1,9
" (Nettowert) ¹⁾	111	16	6,9
" (Nettowert) ²⁾	111	36	3,1
Materialvorräte	44	12	3,7

1) bilanzmäßiger Ausweis unter Anwendung der in der BRD steuerrechtlich anerkannten Abschreibungssätze (Abschreibungstabellen)

2) Substanzwert aus der Sicht der Unternehmensbewertung

Die Verminderung der Bruttowerte der Grundmittel auf fast die Hälfte des Mark-Ausweises wird vor allem durch den relativ hohen Anteil der aus dem NSW importierten Ausrüstungen verursacht (Herausrechnung des Richtungskoeffizienten).

Die noch stärkere Abwertung der Nettowerte ergibt sich aus der in der BRD wesentlich kürzeren Nutzungsdauer der Grundmittel.

Auf die Verringerung des Wertes der Materialvorräte wirken insbesondere die in der Bundesrepublik wesentlich niedrigeren Preise für Chemiefasern, Gespinste und Zwirne sowie die Eliminierung des Richtungskoeffizienten aus dem NSW-Importmaterial Nadeln und Platinen.

2. Ertragswertbestimmung

Der für das Jahr 1990 eingeschätzte Umsatz des Betriebes in Höhe von 332 Mark der DDR wird bewertet zu DM auf etwa 92 Mio DM (d.h. auf 28 %) sinken.

Obwohl mit dem Wirksamwerden der Währungsunion sowie der Bilanzumstellung auf DM bei einigen Kostenarten zum Teil erhebliche Senkungen eintreten werden (vor allem Grundmaterial sowie Abschreibungen), kann das Feinstrumpfwerk Thalheim zu DM-Bedingungen zunächst nicht rentabel arbeiten.

Eine auf das 2. Halbjahr 1990 bezogene Rentabilitätsanalyse weist Kosten in Höhe von rund 60 Mio DM bei Erlösen von knapp 50 Mio DM aus.

Vom Betrieb wird bis zum 9. 5. 1990 ein präzisiertes Konzept zur weiteren Unternehmensstrategie mit dem Ziel des schrittweisen Abbaus dieses Verlustes vorgelegt. Nach den bisher diskutierten Vorstellungen geht es dabei vorrangig um solche Maßnahmen wie

- Einsatz anderer (im Inland bisher nicht verfügbarer) Materialarten mit besseren Verarbeitungseigenschaften (Senkung von Materialverlusten, Ausschuß sowie Produktionszeiten)
- umfassende Senkung der Gemeinkosten, insbesondere für Leitung und Verwaltung (Angaben zum Umfang des vorgeschenen Abbaus der gegenwärtig 1.300 Beschäftigten können z.Z. nicht gemacht werden)
- Erzielung höherer Durchschnittspreise durch bessere Vermarktung der Erzeugnisse (u.a. Kooperation mit Markenfirmen der BRD, hochwertige Aufmachung der Erzeugnisse).

Nach dem bisherigen Stand kann eingeschätzt werden, daß der Betrieb auch im Jahre 1991 noch mit Verlust arbeiten muß. Ab 1992 könnte eine rentable Produktion erreicht werden.

3. Zu inhaltlichen Problemen im Zusammenhang mit der Währungsunion

Die ersten Ergebnisse der durchgeführten Bewertung zu DM lassen bereits erkennen, daß wie im Feinstrumpfwerk Thalheim auch in einer größeren Zahl weiterer Betriebe die Umstellung der Vermögenswerte in einem ungünstigeren Verhältnis als 2 M = 1 DM vorgenommen werden muß.

Für die Umstellung der Verbindlichkeiten der Betriebe ist jedoch ein einheitlicher Kurs von 2 : 1 vorgesehen.

Daraus ergibt sich für die betroffenen Betriebe eine weitere Erhöhung des Kreditanteils an der Finanzierung der Grund- und Umlaufmittel. Die damit verbundene hohe Zins- und Tilgungsbelastung wird von den Betrieben als sehr erschwerend bzw. existenzgefährdend eingeschätzt.

Es wird deshalb die Forderung gestellt, die Kredite differenzierte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vorzunehmenden Abwertung des Sachvermögens der Betriebe auf DM umzustellen.

문서 번호 34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 작업을 위한 차관급 회담

1990 년 5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연방 수상청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재무부, 법무부 등 각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독일통일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재무차관이었던 호스트 쾰러가 통일문제에 관해 동독의 각 부처 담당자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부처의 대표들이 서독 정부가 그 때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재정의 건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출처: 독일연방 공문서관: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결과 프로토콜 날짜 없음

(Bundesarchiv: BArch, B.136/24370,51-14223 Sta 1 Bd. 6- Undatiertes Ergebnisprotokoll)

Nr. 289
Besprechung der beamteten Staatssekretäre
Bonn, 28. Mai 1990

BArch, B 136/24370, 51 – 14223 Sta 1 Bd. 6. – Undatiertes Ergebnisprotokoll des RL Wormit. Vorlage an St Schlecht mit der Bitte um Billigung. Verteiler: StM Stavenhagen, alle beamteten Staatssekretäre, AL 1–6, LASD, MD Schmülling (BPA), LKB, PR/Chef BK, Herr Wormit, Frau Groschek, VS-Registrierung. – Besprechungsbeginn: 9.30 Uhr.

Den Vorsitz führt St Schlecht.

1. Tagesordnung für die Kabinettsitzung am Mittwoch, 30. Mai 1990, 10.00 Uhr, Bundeskanzleramt

...¹

TOP 6:

Deutschlandpolitische Fragen²

St Kinkel spricht die Frage der Finanzierung der 100 Richterstellen an, die in der DDR zum Aufbau [der] verschiedenen Gerichtsbarkeiten dringend benötigt werden. Die Länder begehren die Übernahme von 50% der vorerst auf drei Jahre geplanten Finanzierung durch den Bund. St Köhler sagt eine mit St Klemm abgestimmte Beurteilung dieser Frage bis zum 30.05.1990 zu. Er verweist in diesem Zusammenhang auf die prinzipielle Haltung der Bundesregierung zur Finanzierungsfrage, räumt jedoch ein, daß der angesprochene Bereich von eigener Qualität sei.

St Köhler verweist auf Verhandlungen verschiedener Ministerien mit den entsprechenden Ressorts der DDR, in denen teilweise über den Rahmen des Staatsvertrages hinausgegangen werde. Er halte dies für bedenklich; keinesfalls dürfe das bestehende finanzpolitische Fundament gefährdet werden. Bei ihren Aktivitäten müßten die Ressorts dies im Auge behalten und entsprechende Disziplin wahren.

Zwischen den Staatssekretären Schaumann, Tegtmeier, Knittel, Ziller, Priesnitz, Carl, Stroetmann, Chory, Kroppenstedt, Eisenkrämer, Köhler und Schlecht führt dieser Hinweis zu einer ausführlichen Diskussion über Art und Umfang des Gestaltungsspielraums zwischen den Ministerien der Bundesregierung und der DDR in einzelnen Politikbereichen vor dem Hintergrund des Staatsvertrages und der haushaltsmäßigen Spielräume.

St Schlecht faßt die Diskussion dahingehend zusammen, daß der BMF die Ressorts über die finanzpolitischen Rahmenbedingungen der Zusammenarbeit mit der DDR unterrichten wird. Daneben erscheine es sinnvoll, daß das Kanzleramt Art und Umfang der politischen Koordination in den einzelnen Schwerpunktbereichen gegenüber den Ressorts erläutere; Einladung hierzu durch das Bundeskanzleramt solle möglichst rasch erfolgen.

St Köhler verteilt eine Aufstellung seines Hauses zur Betreuung der Bundestagsausschüsse im Rahmen der dortigen Beratungen des Vertragsentwurfes und des Ratifizierungsgesetzes. Nach kurzer Erörterung besteht Einvernehmen, daß die in dieser Aufstellung enthaltene Zuordnung der Bundestagsausschüsse zu dem an den Vertragsverhandlungen unmittelbar beteiligten Ressorts die bestehenden Ressortzuständigkeiten nicht berühre. Vielmehr – so faßt St Schlecht die Diskussion zusammen – würden die Fachausschüsse selbstverständlich entsprechend der ständigen Praxis von den Fachressorts bedient. Diese hätten für die angemessene Vertretung der Bundesregierung im Ausschuß zu sorgen. Für den Fall allerdings, daß übergreifende Probleme auftauchten, die nur aus den vorangegangenen Verhandlungen heraus beurteilt werden könnten, verlange es die Verantwortlichkeit der einzelnen Ressorts, die in diesem Zusammenhang an den Verhandlungen

gen beteiligten Ressorts von sich aus zu den Ausschußsitzungen hinzuzuziehen. Als so verstandene Hilfestellung für die Ressorts wird die Unterlage des BMF begrüßt.

...³

Wormit

Termin der nächsten St-Besprechung

wird mitgeteilt.

...⁴

1 TOP 1 bis TOP 5 behandeln sachfremde Themen.

2 Kursiv in der Textvorlage.

3 TOP 7 bis TOP 10 und nachfolgende Abschnitte „2. Kabinettzeitplanung“ und „3. Verschiedenes“ behandeln sachfremde Themen.

4 Nicht abgedruckt: „Kanzleiberichtigung“ zum Ergebnisprotokoll über die Besprechung der beamteten Staatssekretäre am 7. Mai 1990; dazu Nr. 269 Anm. 1 und 2.

문서 번호 35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입장

1990 년 6 월 16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외무성, 동독 외무장관 마르쿠스 메켈, 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스제프스키

내용:

이 문서는 폴란드 외무장관 스쿠비제비스키가 동서독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과 관련하여 동독 외무장관 메켈에게 전달한 폴란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문건을 통해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문제에 관한 폴란드의 입장 또한 전달되었다.

이 문서에서 폴란드 정부는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과 나아가 독일통일이 가져올 수 결과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독일통일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독일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폴란드가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별로의 문서에서는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문제에 관해서는 통일된 독일의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2

warschau blitz

Kopie
Archiv
Bundesanstalt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Erfolgsweise: Archiv Bundesstiftung Aufarbeitung,
Markus Meckel, Akte

383/90 zustellung: 16.6. vormittags

am m. meckel

minister finanzen, w. romberg
minister wirtschaft, g. pohl
staatssekretaer j. misselwitz, mfaa

am skubiszewski uebergab memorandum polnischer regierung
zu auswirkungen staatsvertrag auf polen. inhalt
memorandum wird grundlage fuer position stellv.
ministerpraesident balcerowicz bei gespraechen
19.6. in berlin sein.

gleichlautendes memorandum an brd-botschafter
uebergeben.

am skubiszewski bezeichnete es als zweckmaeszig,
wenn zu in memorandum enthaltener problematik nach
gespraechen polen-ddr und polen-brd moeglichst bald
dreiseitige gespraecher gefuehrt werden.

memorandum
der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i.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hat sich mit gebuerender
aufmerksamkeit mit dem vertrag ueber die schaffung einer
wae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r am 18. mai 1990 in bonn unterzeichnet
wurde, vertraut gemacht.

im zusammenhang mit den bestimmungen dieses vertrages
sowie den weiteren folgen des vereinigungsprozesses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fuer den breiten umfang der wirt-
schaftlichen beziehungen stell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fest, dasz sie diesen fragenkomplex als
eines der grundsuetzlichen probleme im bereich der aeuszeren
aspekte der erlangung der 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
betrachte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geht dabei davon aus,
dasz fuer die gestaltung der keunftigen friedlichen und gut-
nachbarlichen beziehungen zwischen polen und dem vereinten
deutschland auch die sicherung seiner wirtschaftlichen
interessen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ist. eine solche

sicherung wird eine breite und stabile grundlage fuer die entwicklung der gegenwaertig vorteilhaften, effektiven und engen wirtschaftlichen zusammenarbeit schaffen.

ii.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moechte die bedeutung hervorheben, die die dauerhaften wirtschafts- und handels- und finanzbeziehungen zwischen polen und jedem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in den vergangenen jahrzehnten gespielt haben. ihr einfluss auf die volkswirtschaft polens sowie auf den verlauf der gegenwaertig in polen eingeleiteten tiefgreifenden systemveraenderungen ist bedeutend.

es sind viele verbindungen, abhaengigkeiten und oekonomische verpflichtungen entstanden, die nicht mit schaedlichen folgen fuer beide oder einen der partner veraendert oder ausgesetzt werden sollten.

im bewusstsein der kompliziertheit der prozesse der gegenseitigen anpassung, des aufeinanderzugehens sowie der anwendung von neuen kriterien fuer die wirtschaftliche effizienz in den beziehungen zwischen den volkswirtscha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der auffassung, dasz die sich vereinigenden deutschen staaten - sowohl in der phase der herstellung einer vollstaendigen staatlichen einheit, wie auch die kuenftige regierung des vereinten deutschland in den kommenden jahren - alles unternehmen werden, damit die kosten, die mit dem vereinigungsprozess der wirtschaftssysteme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verbunden sind, das niveau der zusammenarbeit und die einhaltung der verpflichtungen gegeneuber anderen staaten, darunter die beziehungen zu polen, nicht negativ belasten. dem polnischen staat und der polnischen bevoelkerung sollten aus den direkten oder indirekten oekonomischen folgen der kuenftigen deutschen einheit keine nachteile erwachsen.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hat die im guten glauben gemeinten erklaerungen der regierungsvertreter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dasz die vereinigung deutschland keine negativen folgen fuer andere staaten, insbesondere fuer polen als den unmittelbaren nachbar, nach sich ziehen wird, zur kenntnis genommen.

iii.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vertritt die ansicht, dasz kein bilaterales oder multilaterales abkommen, das zwischen

polen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schlossen wurde und als wesentlich von dem standpunkt der wirtschaftsinteressen der ver-tragsparteien anerkannt wird, einseitig ausgesetzt oder ge-kuendigt wird.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ist der meinung, dasz im ergebnis der bereits aufgenommenen arbeit der expertengruppe fuer die rechtsnachfolge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zur frage der vertraege, die regier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polen bald uebereinstimmend vereinbaren koennen, welche der frueher geschlossenen inter-nationalen vereinbarungen ue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wirtschaft, des handels und des transports, der wissenschaft und technik ihre gueltigkeit nach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beibehalten und welche einer aenderung beduerfen oder von der rechtsnachfolge nicht erfaszt werden.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geht von der ueberzeugung aus, dasz im guten glauben und uneingeschraenkt der artikel 35 des vertrages ueber die waehrungs- und wirtschafts- und sozial-union eingehalten wird, der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m 18. mai. 1990 unterzeichnet worden ist, der bestimmt, dasz dieser vertrag die von beiden deutschen staaten abge-schlossenen voelkerrechtlichen vertraeg mit drittstaaten nicht beruehr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moechte da-bei die hoffnung zum ausdruck bringen, dasz die umsetzung des artikels 35 den im artikel 31 der wiener konvention ueber die staatennachfolge in vertraege vom 23. august 1978 enthaltenen normen entsprechen wird.

iv.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geht insbesondere von den folgenden grundsuetzen aus:

1.
waehrend der entwicklung von freien wirtschafts- und handels-beziehungen wird sich der stand der gegenwaertigen lieferungen nicht verschlechtern und ein ungehinderter zugang zum mark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und folglich zum markt des vereinten deutschen staates - fuer den export polnischer waren und leistungen gesichert sein. der umfang der bisher polen und polnischen unter-nehmen durch beide deutsche staaten gewaehrten rechte, erleichterungen und praerferenzen wird nicht

verringert.

2.
die mit polen und seinen handels-, produktion-, verkehrs- und schiffahrtsbetrieben vereinbarten kontingente und mengen fuer den export, industrielle kooperation, lohnveredelung, dienstleistungen und transport werden nicht verringert, ausgesetzt oder auf eine andere art und weise reduziert.
3.
der aus polen kommende import von waren, leistungen und produktionskooperation wird steuer- und zollmaeszig nicht staerker belastet, als bisher der fall war.
4.
die einfuehrung der waehrungsunion wird fuer polen und seine buerger keine finanziellen nachteile bringen, insbesondere aber wird die umstellung der laufenden einkommen und bestaende in ddr-mark, die polnische buerger beziehen bzw. besitzen, aequivalent und ohne diskriminierung geregelt.
5.
das prinzip der kontinuiertaet der von den wirtschaftssubjek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republik polen uebernommenen verpflichtungen wird im falle ihrer aufloesung, eigentumsmaesziger umwandlung oder umstrukturierung beibehalten, dieses trifft auch auf wirtschaftssubjekte zu, die eigentum des staates sind.
6.
die vertraege ueber die durchfuehrung von investitionen sowie bau- und montagearbeiten - sowohl auf de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ls auch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werden voll realisiert, wobei die lohn-, sozial-, versicherungs- und sonstigen leistungen fuer polnische belegschaften und spezialisten, die diese vertraege ausfuehren, im zusammenhang mit der einfuehrung von neuen zahlungsloesungen, die aus dem am 18. mai 1990 unterzeichneten vertrag ueber die schaffung einer wae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resultieren, nicht reduziert oder eingeschraenkt werden.
7.
das beschaeftigungsniveau von polnischen arbeitnehmern und spezialisten auf de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sowohl in den betrieben als auch im grenzverkehr - wird nicht verringert, die arbeits- und lohnbedingungen werden voll und ganz mit den abgeschlossenen vertragen, unter beruecksichtigung der neuen waehrungs- und

finanzprinzipien,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gefuehrt werden, uebereinstimmen.

8.

die gemeinsam gebildeten betriebe und technischen einrichtungen, die eigent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republik polen sind, werden ihre taetigkeit unter beruecksichtigung d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stehenden neuen wirtschafts- und finanzbedingungen fortfuehren.

9.

es werden bald voraussetzungen fuer eine ungehinderte taetigkeit der polnischen wirtschafts-, handels- und verkehrsvertretungen geschaffen, entsprechend der lage, die im ergebnis der wae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tehen wird.

10.

das transit von polnischen waren und personen durch das territorium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und spaeter des vereinten deutschen staates wird nicht eingeschraenkt oder auf eine andere art und weise diskriminiert, neue bedingungen fuer transitzahlungen werden im zusammenhang mit dem inkrafttreten des vertrages ueber die schaffung einer waehrungs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traglich geregel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behaelt sich das recht auf eine mehrjaehrige anpassungsfrist vor, falls die erhebung von transport- oder transitgebuehren vorgesehen wird, die die polnischen transportorganisationen bisher auf dem gebiet der sich vereinigenden deutschen staaten nicht gezahlt haben.

11.

im gegenseitigen zusammenwirken wird fuer den umweltschutz der vorrang gewaehrt. die bisherigen zwei- und mehrseitigen vertraege auf diesem gebiet werden eingehalten.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hegt die hoffnung, dasz die kuenftige zusammenarbeit polens mit dem vereinten deutschen staat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wirksam zum abbau von gefahren beitragen wird, insbesondere im bereich der energiewirtschaft, die anstrengungen fuer die errichtung eines subregionalen systems fuer den schutz der ostsee sollen intensiviert werden.

darueber hinaus moechte polen die aufmerksamkeit auf die rechtsnachfolge bezueglich der forderungen lenken, die bisher nicht erfuehrt wurden oder zum zeitpunkt der vereinigung nicht erfuehrt werden. insbesondere ist polen davon ueberzeugt, dasz die

ungerechtfertigt erhobenen transportgebuehren in freikonvertierbarer waehrung nach dem binnen- und nicht nach dem internationalen tarif sowie fuer die genehmigungen der behoerd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uer den transit von waren aus polen nach und aus berlin-west fuer den zeitraum an 1. januar 1986, d.h. vom tage der kuendigung durch polen des briefwechsels zum verkehrsabkommen von 1971, der polnischen seite entsprechend rekompensiert werden. diese praxis wich von den im o.g. vertrag festgelegten transportgrundsuetzen ab und verursachte fuer polen unbegruendete ausgaben.

v.

mit dem inkrafttreten des vertrages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eber die schaffung einer waehrungs-, und wirtschafts- und sozialunion und spaeter mit der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wird eine neue lage im polnisch-deutschen grenzbereich entstehen.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vertritt die ansicht, dasz dieser grenzbereich dem freizuegigen austausch von menschen und waren dienen soll, unter der vollen achtung der souveranitaet der angrenzenden staaten. der entwickelte grenzbereich auf polnischem gebiet - einschliesslich der notwendigen infrastruktur der verkehrstechnischen einrichtungen - wird auch dem transit der deutschen waren in die osteuropaeischen und auszereuropaeischen laender sowie einem umfassenden transit von personen und waren aus anderen europaeischen laendern dienen.

polen nimmt diesen sachverhalt in betracht - es wird eine reihe von verkehrs- und fernmeldetechnik-, sowie dienstleistungsinvestitionen durchgefuehrt oder geplant, es werden neue grenzuebergangsstellen eingerichtet, die den transitverkehr modernisieren und erleichtern werden. all diese vorhaben erfordern erhebliche aufwendungen.

in dieser frage ersuch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um verstaendnis und zusammenarbeit, um beteiligung an dem aufwand sowie um eine unterstuetzung fuer ihre bemuehungen bei internationalen gremien und einrichtungen um finanzielle und technische sondermassnahmen fuer polen zum ausbau und zur modernisierung der transiteinrichtungen, besonders in der ost-west-richtung.

vi.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wird bemueht sein, ihren beitrag zum europaeischen einigungsprozess einzubringen. im einzelnen:

1.

rechne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mit einer aktiven unterstuetzung der beteiligung polens an europaeischen gremien der wirtschaftlichen zusammenarbeit, besonders was ihre bemuehungen um die assoziierung mit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 - und in fernerer sicht - um die mitgliedschaft angeh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erhofft auch hilfe und beguenstigung im bereich der anpassung der volkswirtschaft polens an das integrierte europaeische system.

2.

rechne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mit der schaffung, waehrend einer mehrjaehrigen uebergangszeit, einer oekonomischen sonderzone auf dem heutigen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ieser zone wuerden fuer polen keine importeinschraenkungen, die in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 gelten, anwendung finden. eine besondere betrachtung des gebie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n wirtschaftsbeziehungen zu polen wird vom gegenseitigen vorteil sein und die zusammenarbeit erleichtern.

3.

rechne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mit einer unterstuetzung fuer ihre postulate und vorschlaege bezueglich der finanziellen und kreditmaeszigen hilfe, besonders aus dem internationalen waehrungsfonds und der internationalen bank fuer wiederaufbau und entwicklung. eine positive pruefung des polnischen vorschlages zur teilweisen streichung der verschuldung, die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erheblich erschwert, wird besonders hilfreich sein.

4.

ausgehend vom bedeutenden rohstoff-, produktions- und wissenschaftlich-technischen potential polens - hegt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die hoffnung, dasz polen sich an den zur zeit entstehenden makroprojekten der europaeischen wirtschaftlichen zusammenarbeit, an den neuen modellen des finanziellen zusammenwirkens sowie an den multilateralen forschungsvorhaben und projekten beteiligen wird und dabei die erleichtungen fuer den transfer des gedankengutes, der dokumentation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n fachliteratur, nutzen wird.

polen ist gewillt als nuetzlicher, zuverlaessiger und kreativer partner der voelker europas und des kuenftig vereinten deutschlands zur verfuegung zu stehen. polen moechte auch fuer die schaffung neuer modelle der internationalen zusammenarbeit

sowie fuer die anpassungsprozesse an die hoeheren formen der europaeischen wirtschaftsintegration dienlich sein.

die wirtschaftliche, finanzielle und wissenschaftlich-technische zusammenarbeit zwischen polen und dem kuenftigen vereinten deutschland - also zwischen den zentral gelegenen staaten in europa - sollte effektiv auf die beschleunigung der gesamt-europaeischen einigungsprozesse hinwirken.

vii.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moechte ihren standpunkt darlegen und dabei die bereitschaft zu einem engen und praktischen zusammenwirken mit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und spaeter mit dem vereinten deutschland erklaren. dabei laeszt sich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von gemeinsamen oekonomischen interessen und dem wohle der harmonischen zusammenarbeit in europa leiten.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erklaert sich bereit, unverzueglich die oben erwaehten fragen zu beraten, zu konkretisieren und zu loesen. dieses ist moeglich auf dem diplomatischen wege, durch beratungen von experten- und entsprechenden verhandlungsgruppen, sowie in den gespraechen zwischen den zustaendigen ministern oder hochrangigen regierungsvertretern.

die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ist davon ueberzeugt, dasz die vereiner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gemaesz dem voelkerrecht und den bestimmungen der schluszakte der konferenz fue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erfolgen, einen vorteilhaften einfluss auf die europaeische intergration und die friedliche ordnung auf unserem kontinent ausueben, den voelkern europas eine annaeherung ermoeoglicht sowie zwischen polen und deutschland eine feste grundlage fuer gutnachbarliche, gegenseitig vorteilhafte und freundschaftliche zusammenarbeit schaffen wird.

warschau blitz

384/90 zustellung 16.6. vormittags

Kopie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Zitierweise: Archiv Bundesstiftung Aufarbeitung,
Markus Meckel, Akte

am m. meckel
staatssekretär j. misselwitz
h. schwiesau, bl, mfaa

am skubiszewski 15.6. in gesprache zusaetzlich zu fragen
memorandum zu auswirkungen staatsvertrag ddr-brd auf
polen:

- gesprache polen-ddr-brd zu grenze laufen nicht ohne
schwierigkeiten, aber laufen. grenzfrage im groszen und
ganzen diskutiert, womit material fuer resolution
volkskammer gegeben ist. ddr hat klaren standpunkt,
polen hat ddr-entwurf als grundlage diskussion akzeptiert.
standpunkte am meckel und skubiszewski uebereinstimmend,
vertragsentwurf bis zuende zu diskutieren. so kann klares
bild erreicht werden, wo uebereinstimmung und wo
unterschiede. gleichzeitig klar darueber, dasz durch
gesprache ueber vertragstext fuer gesamtdeutsche regierung
keine verpflichtungen entstehen. verhandlung vertrages
ist sache gesamtdeutscher regierung. hofft dennoch, dasz
bk kohl mandat fuer gesprache gibt. erwartet zustande-
kommen naechster runde rp-ddr-brd nach verabschiedung
resolutionen/notifizierung. polen legt groszen wert
auf endgueltigkeit grente als teil friedensregelung
bzw. endregelung in europa.

ist an information ueber text volkskammer-resolution
interessiert, wenn auch klar, dasz resolution einseitige
angelegenheit ddr-parlament.

- betrachtet teilnahme am skubiszewski und meckel
4. juli festkonzert frankfurt/oder und kurze ansprache
als vereinbart.

bemerkung: mit pressekonferenz regierungssprecher 13.6.
und presseveroeffentlichung heute begann polnische seite,
korrektur eigener position zu paraphierung grenzvertrages
in oeffentlichkeit zu erklaren und zugleich unterstuetzung
fuer polnische forderung aufzubauen, gesprache zu
vertragstext nach verabschiedung resolutionen deutscher
parlamente weiterzufuehren. kritische wertung haltung
ddr durch sprecher und in teil presse (nicht in
regierungsorgan) gibt nicht genau offizielle
polnische haltung wieder. aus meiner sicht reaktion
regierung nicht erforderlich.

van zwoll
15.6.

문서 번호 36

1990년 9월 23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 (재산법)

1990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

이 문서는 독일통일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한 소유권 반환과 관련된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소유권을 몰수당했거나 국유재산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3 조에는 국유재산에 대해 원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소유자는 해당 토지, 건물 또는 사업체를 관장하는 기관에 해지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토지, 건물과 사업체의 반환은 법률적으로 공증되어야만 한다.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에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사용방법과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1) 그 대상물이 공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거나, (2) 이미 공공목적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3) 주택건설 또는 주거지 건설에 통합된 경우, (4) 또는 그 대상이 한 사업체에 흡수되어서 그 소유권을 반환할 경우 사업체에 경제적인 해가 될 경우 그것은 소유권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문서 번호 37

1990 년 9 월 23 일자 미해결된 재산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 (재산법)

1990 년 6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테오 바이겔 연방재무부장관, 발터 롬베르그 동독 재무부장관

내용:

이 문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국유 건물과 부동산은 신탁관리청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소유자가 반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은 공증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소유자는 해지금을 지불해야하며, 그 이후 모든 권리는 새로운/원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59-1168.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urde als Anlage II,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 Nr. 5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sgesetz -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zum Umgang mit den Unterlagen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m Deutschen Bundestag verabschiedet.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ermögensgesetz - VermG)

VermG

Ausfertigungsdatum: 23.09.1990

Vollzitat:

"Vermögen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9. Februar 2005 (BGBl. I S. 205), das zuletzt durch Artikel 3 des Gesetzes vom 23. Mai 2011 (BGBl. I S. 920) geändert worden ist"

Stand: Neugefasst durch Bek. v. 9.2.2005 I 205;
zuletzt geändert durch Art. 3 G v. 23.5.2011 I 920

Fußnote

(+++ Textnachweis ab: 3.10.1990 +++)

Fortgeltendes Recht der ehem.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m. Anlage II Kap. III Sachg. B Abschn. I Nr. 5 nach Maßgabe d. Art. 9 EinigVtr v. 31.8.1990 iVm Art. 1 G v. 23.9.1990 II 885, 1159 mWv 29.9.1990

Abschnitt I Allgemeine Bestimmungen

§ 1 Geltungsbereich

(1) Dieses Gesetz regelt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an Vermögenswerten, die

- a) entschädigungslos enteignet und in Volkseigentum überführt wurden;
- b) gegen eine geringere Entschädigung enteignet wurden, als sie Bürgern der früher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stand;
- c) durch staatliche Verwalter oder nach Überführung in Volkseigentum durch den Verfügungsberechtigten an Dritte veräußert wurden;
- d) auf der Grundlage des Beschlusses des Präsidiums des Ministerrates vom 9. Februar 1972 und im Zusammenhang stehender Regelungen in Volkseigentum übergeleitet wurden.

(2) Dieses Gesetz gilt des weiteren für bebaute Grundstücke und Gebäude, die auf Grund nicht kostendeckender Mieten und infolgedessen eingetretener oder unmittelbar bevorstehender Überschuldung durch Enteignung, Eigentumsverzicht, Schenkung oder Erbausschlagung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3) Dieses Gesetz betrifft auch Ansprüche an Vermögenswerten sowie Nutzungsrechte, die auf 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zum Beispiel durch Machtmißbrauch, Korruption, Nötigung oder Täuschung von seiten des Erwerbers, staatlicher Stellen oder Dritter, erworben wurden.

(4) Dieses Gesetz regelt ferner die Aufhebung der

- staatlichen Treuhand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von Bürgern, die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hne die zum damaligen Zeitpunkt erforderliche Genehmigung verlassen haben;
- vorläufigen 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von Bürg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sowie von juristischen Personen mit Si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Berlin (West), die Staatsorgan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urch Rechtsvorschrift übertragen wurde;
- Verwaltung des ausländischen Vermögens, die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tragen wurde

(im folgenden staatliche Verwaltung genannt) und die damit im Zusammenhang stehenden Ansprüche der Eigentümer und Berechtigten.

(5) Dieses Gesetz schließt die Behandlung von Forderungen und anderen Rechten in bezug auf Vermögenswerte gemäß den Absätzen 1 bis 4 ein.

(6) Dieses Gesetz ist entsprechend auf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von Bürgern und Vereinigungen anzuwenden, die in der Zeit vom 30. Januar 1933 bis zum 8. Mai 1945 aus rassistischen, politischen, religiösen oder weltanschaulichen Gründen verfolgt wurden und deshalb ihr Vermögen infolge von Zwangsverkäufen, Enteignungen oder auf andere Weise verloren haben. Zugunsten des Berechtigten wird ein verfolgungsbedingter Vermögensverlust nach Maßgabe des II. Abschnitts der Anordnung BK/O (49) 180 der Alliierten Kommandantur Berlin vom 26. Juli 1949 (VOBl. für Groß-Berlin I S. 221) vermutet.

(7) Dieses Gesetz gilt entsprechend für die Rückgabe von Vermögenswerte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nach anderen Vorschriften erfolgten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straf-, ordnungsstraf- oder verwaltungsrechtlicher Entscheidungen steht.

(8) Dieses Gesetz gilt vorbehaltlich seiner Bestimmungen über Zuständigkeiten und Verfahren nicht für

- a) Enteignungen von Vermögenswerten auf besatzungsrechtlicher oder besatzungshoheitlicher Grundlage; Ansprüche nach den Absätzen 6 und 7 bleiben unberührt;
- b)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die seiten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urch zwischenstaatliche Vereinbarungen geregelt wurden;
- c) Anteilsrechte an der Altguthabenablösungsanleihe;
- d) Ansprüche von Gebietskörperschaften des beitretenden Gebiets gemäß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soweit sie vom Kommunalvermögensgesetz vom 6. Juli 1990 (GBl. I Nr. 42 S. 660) erfasst sind.

§ 2 Begriffsbestimmung

(1) Berechtig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natürliche und juristische Personen sowie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deren Vermögenswerte von Maßnahmen gemäß § 1 betroffen sind, sowie ihre Rechtsnachfolger. Rechtsnachfolger einer jüdischen juristischen Person oder nicht rechtsfähigen jüdischen Personenvereinigung ist in den Fällen des § 1 Abs. 6 auch, wer auf Grund des Befehls Nr. 82 des Obersten Chefs der sowjetischen Militärverwaltung vom 29. April 1948 (Regierungsblatt für Mecklenburg S. 76) Eigentum an dem entzogenen Vermögenswert erlangt und dieses bis zum 2. Oktober 1990 innegehalten hat. Soweit Ansprüche von jüdischen Berechtigten im Sinne des § 1 Abs. 6 oder deren Rechtsnachfolgern nicht geltend gemacht werden, gelten in Ansehung der Ansprüche nach dem Vermögensgesetz die Nachfolgeorganisationen des Rückerstattungsrechts und, soweit diese keine Ansprüche anmelden, die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 Inc. als Rechtsnachfolger. Dasselbe gilt, soweit der Staat Erbe oder Erbeserbe eines jüdischen Verfolgten im Sinne des § 1 Abs. 6 ist oder soweit eine jüdische juristische Person oder eine nicht rechtsfähige jüdische Personenvereinigung aus den Gründen des § 1 Abs. 6 aufgelöst oder zur Selbstauflösung gezwungen wurde. Im Übrigen gelten in den Fällen des § 1 Abs. 6 als Rechtsnachfolger von aufgelösten oder zur Selbstauflösung gezwungenen Vereinigungen die Nachfolgeorganisationen, die diesen Vereinigungen nach ihren Organisationsstatuten entsprechen und deren Funktionen oder Aufgaben wahrnehmen oder deren satzungsmäßige Zwecke verfolgen; als Rechtsnachfolger gelten insbesondere die Organisationen, die auf Grund des Rückerstattungsrechts als Nachfolgeorganisationen anerkannt worden sind.

(1a) Die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 Inc. kann ihre Rechte auf die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 GmbH übertragen. Die Übertragung bedarf der Schriftform. § 4 Abs. 5 des Investitionsvorranggesetzes findet keine Anwendung. Satz 3 gilt auch, wenn ein Berechtigter seine Ansprüche unmittelbar oder mittelbar unter Beachtung von § 3 Abs. 1 Satz 2 auf eine ihm nahe stehende juristische Person übertragen hat, deren Aufgabe die Durchsetz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ist und die dabei die wirtschaftlichen Interessen der Geschädigten und ihrer Rechtsnachfolger verfolgt; dies gilt nicht, wenn in dem Verfahren nach dem Investitionsvorranggesetz die letzte Verwaltungsentscheidung vor dem 8. November 2000 erlassen worden ist.

(2) Vermögenswer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bebaute und unbebaute Grundstücke sowie rechtlich selbständige Gebäude und Baulichkeiten (im folgenden Grundstücke und Gebäude genannt), Nutzungsrechte und dingliche Rechte an Grundstücken oder Gebäuden, bewegliche Sachen sowie gewerbliche Schutzrechte, Urheberrechte und verwandte Schutzrechte. Vermögenswer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auch Kontoguthaben und sonstige auf Geldzahlungen gerichtete Forderungen sowie Eigentum/Beteiligungen an

Unternehmen oder an Betriebsstätten/Zweigniederlassungen von Unternehmen mit Sitz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3) Verfügungsberechtigter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bei der Rückgabe von Unternehmen derjenige, in dessen Eigentum oder Verfügungsmacht das entzogene Unternehmen ganz oder teilweise steht, sowie bei Kapitalgesellschaften deren unmittelbare oder mittelbare Anteilseigner und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anderen Vermögenswerten diejenige Person, in deren Eigentum oder Verfügungsmacht der Vermögenswert steht. Als Verfügungsberechtigter gilt auch der staatliche Verwalter. Stehen der Treuhandanstalt die Anteilsrechte an Verfügungsberechtigten nach Satz 1 unmittelbar oder mittelbar allein zu, so vertritt sie diese allein.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oder ein Rechtsnachfolger der Treuhandanstalt nach § 23a Abs. 3 des Treuhandgesetzes können ihre Verfügungsberechtigung nach Satz 1 sowie die Alleinvertretungsbefugnis nach Satz 3 durch Vereinbarung auf eine Kapitalgesellschaft übertragen, an der ihr, ihm o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Anteilsrechte unmittelbar oder mittelbar allein zustehen. Mit der Übertragung der Verfügungsberechtigung übernimmt die Kapitalgesellschaft die durch dieses Gesetz begründeten Rechte und Pflichten des in Satz 4 genannten Verfügungsberechtigten.

(4) Unter Schädigung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jede Maßnahme gemäß § 1 zu verstehen.

§ 2a Erbgemeinschaft

(1) Ist Rechtsnachfolger des von Maßnahmen nach § 1 Betroffenen eine Erbgemeinschaft, deren Mitglieder nicht sämtlich namentlich bekannt sind, so ist der Vermögenswert der Erbgemeinschaft nach dem zu bezeichnenden Erblasser als solcher zurückzuübertragen. Die Erbgemeinschaft ist nach Maßgabe von § 34 im Grundbuch als Eigentümerin einzutragen.

(1a) Ist eine Erbgemeinschaft Rechtsnachfolger eines jüdischen Berechtigten im Sinne des § 1 Abs. 6, so tritt die in § 2 Abs. 1 Satz 3 bestimmte Nachfolgeorganisation oder, wenn diese keine Ansprüche auf den Vermögenswert angemeldet hat, die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 Inc. an die Stelle der namentlich nicht bekannten Miterben. Sie ist zusammen mit den bekannten Miterben nach Maßgabe des § 34 in ungeteilter Erbgemeinschaft als Eigentümerin im Grundbuch einzutragen. Die Sätze 1 und 2 gelten entsprechend, wenn der Aufenthalt eines namentlich bekannten Miterben, der an der Stellung des Antrags nach § 30 nicht mitgewirkt hat, unbekannt ist. § 2 Abs. 1a bleibt unberührt.

(2) Eine bereits erfolgte Auseinandersetzung über den Nachlass des Betroffenen gilt als gegenständlich beschränkte Teilauseinandersetzung.

(3) Ein an der Stellung des Antrags nach § 30 nicht beteiligter Miterbe gilt in Ansehung des Vermögenswertes nicht als Erbe, wenn er innerhalb der in Satz 2 bezeichneten Frist gegenüber der für die Entscheidung zuständigen Behörde schriftlich auf seine Rechte aus dem Antrag verzichtet hat. Die Erklärung des Verzichts nach Satz 1 muss sechs Wochen von der Erlangung der Kenntnis von dem Verfahren nach diesem Gesetz, spätestens sechs Wochen von der Bekanntgabe der Entscheidung an, eingegangen sein; lebt der Miterbe im Ausland, beträgt die Frist sechs Monate.

(4) Diese Vorschriften gelten entsprechend, wenn eine Erbgemeinschaft als solche von Maßnahmen nach § 1 betroffen ist.

Abschnitt II Rückübertragung von Vermögenswerten

§ 3 Grundsatz

(1) Vermögenswerte, die den Maßnahmen im Sinne des § 1 unterlagen und in Volkseigentum überführt oder an Dritte veräußert wurden, sind auf Antrag an die Berechtigten zurückzuübertragen, soweit dies nicht nach diesem Gesetz ausgeschlossen ist. Der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Rückgabe oder Entschädigung kann abgetreten, verpfändet oder gepfändet werden; die Abtretung ist unwirksam, wenn sie unter einer Bedingung oder Zeitbestimmung erfolgt; sie und die Verpflichtung hierzu bedürfen der notariellen Beurkundung, wenn der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eines Grundstücks, Gebäudes oder Unternehmens gerichtet ist; eine ohne Beachtung dieser Form eingegangene Verpflichtung oder Abtretung wird ihrem ganzen Inhalte nach gültig, wenn das Eigentum an dem Grundstück, Gebäude oder Unternehmen gemäß § 34 oder sonst wirksam auf den Erwerber des Anspruchs übertragen wird. Ein Berechtigter, der einen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stellt oder stellen könnte, kann seinen Antrag nicht auf die Rückgabe einzelner Vermögensgegenstände beschränken, die sich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in seinem Eigentum befanden; § 6

Abs. 6a Satz 1 bleibt unberührt. Gehören Vermögensgegenstände, die mit einem nach § 1 Abs. 6 in Verbindung mit § 6 zurückzugebenden oder einem nach diesem oder einem anderen nach dem 8. Mai 1945 ergangenen Gesetz bereits zurückgegebenen Unternehmen entzogen oder von ihm später angeschafft worden sind, aus irgendwelchen Gründen nicht mehr zum Vermögen des Unternehmens, so kann der Berechtigte verlangen, dass ihm an diesen Gegenständen im Wege der Einzelrestitution in Höhe der ihm entzogenen Beteiligung Bruchteilseigentum eingeräumt wird; dieser Anspruch besteht auch, wenn eine unmittelbare oder mittelbare Beteiligung an einem Unternehmen Gegenstand der Schädigung nach § 1 Abs. 6 ist und das Unternehmen zum Zeitpunkt der Schädigung nicht von Maßnahmen nach § 1 betroffen war; in Fällen der mittelbaren Beteiligung gilt dies nur, wenn das Beteiligungsunternehmen jeweils mehr als den fünften Teil der Anteile, auf deren Berechnung § 16 Abs. 2 und 4 des Aktiengesetzes anzuwenden ist, am gezeichneten Kapital eines Unternehmens besaß; als Zeitpunkt der Schädigung gilt der Zeitpunkt der Entziehung des Unternehmens oder der Beteiligung. Berechtigter im Sinne des Satzes 4 ist der geschädigte Gesellschafter und nicht das in § 6 Abs. 1a bezeichnete Unternehmen. Es wird vermutet, dass Gegenstände, die von einem dieser Unternehmen bis zum 8. Mai 1945 angeschafft worden sind, mit Mitteln des Unternehmens erworben wurde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ist auf seinen Antrag zu gestatten, den Anspruch des Berechtigten auf Einräumung von Bruchteilseigentum mit dem anteiligen Verkehrswert abzufinden. Ist der Anspruch auf Vermögenswerte gerichtet, die zu einem selbständigen Unternehmen zusammengefasst sind oder ohne erhebliche wirtschaftliche Nachteile für den Berechtigten zu einem Unternehmen zusammengefasst werden können, so ist der Berechtigte auf Antrag des Verfügungsberechtigten an dem Unternehmen entsprechend zu beteiligen; gehören solche Vermögenswerte zu einem Unternehmen, das auch anderes Vermögen besitzt, so ist auf Antrag des Verfügungsberechtigten dem Berechtigten eine entsprechende Beteiligung an dem die Vermögenswerte besitzenden Unternehmen einzuräumen, wenn dies nicht zu erheblichen wirtschaftlichen Nachteilen für den Berechtigten führt. Der Berechtigte ha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nach dem 2. Oktober 1990 aufgewendeten Kosten für vor der Konkretisierung des Antrags auf Rückübertragung (§ 11 Abs. 1 Grundstücksverkehrsordnung) in bezug auf den Vermögenswert durchgeführte oder begonnene Bebauungs-, Modernisierungs- oder Instandsetzungsmaßnahmen anteilig zu erstatten, sobald über die Einräumung von Bruchteilseigentum bestandskräftig entschieden wurde, soweit diese Kosten nicht mit Entgelten im Sinne des § 7 Abs. 7 Satz 2 und 4 oder entsprechend der Finanzierung mit künftigen Entgelten dieser Art verrechenbar sind; im Streitfall entscheiden die ordentlichen Gerichte. Die Sätze 4 bis 9 sind entsprechend auf Vermögenswerte anzuwenden, die nach § 1 Abs. 6 in Verbindung mit § 6 Abs. 6a Satz 1 zurückzuübertragen sind, auch wenn sie schon vor der Stilllegung nicht mehr zum Vermögen des Unternehmens gehörten; § 6 Abs. 1a, Abs. 6a Satz 2 gilt nicht. Die Sätze 4 bis 10 sind nicht anzuwenden, wenn für den Wohnungsbau bestimmte Vermögenswerte entsprechend dem überwiegenden Unternehmenszweck eines Entwicklungs-, Siedlungs- oder Wohnungsbauunternehmens, wie er vor der Schädigung bestanden hat, bis zum 8. Mai 1945 an natürliche Personen veräußert wurden, es sei denn, die Veräußerung ist nicht zu einem für das Unternehmen üblichen Preis erfolgt.

(1a) Die Rückübertragung von dinglichen Rechten an einem Grundstück oder Gebäude erfolgt dadurch, dass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iese an rangbereiter Stelle in dem Umfang begründet, in dem sie nach § 16 zu übernehmen wären. Auf Geldleistung gerichtete Rechte können nur in Deutscher Mark begründet werden. Eine Haftung für Zinsen kann höchstens in Höhe von 13 vom Hundert ab dem Tag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begründet werden. Kann das frühere Recht nach den seit dem 3. Oktober 1990 geltenden Vorschriften nicht wiederbegründet werden, ist dasjenige Recht zu begründen, das dem früheren Recht entspricht oder am ehesten entspricht. Bei Grundpfandrechten ist die Erteilung eines Briefes ausgeschlossen. Hypotheken und Aufbauhypotheken nach dem Zivil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als Hypotheken zu begründen. Eine Wiederbegründung erfolgt nicht, wenn der Eigentümer des Grundstücks das zu begründende Grundpfandrecht oder eine dadurch gesicherte Forderung ablöst. Eine Wiederbegründung erfolgt ferner nicht, wenn die Belastung mit dem Recht für den Eigentümer des Grundstücks mit Nachteilen verbunden ist, welche den beim Berechtigten durch die Nichtbegründung des Rechts entstehenden Schaden erheblich überwiegen und der Eigentümer des Grundstücks dem Berechtigten die durch die Nichtbegründung des Rechts entstehenden Vermögensnachteile ausgleicht.

(2) Werden von mehreren Personen Ansprüche auf Rückübertragung desselben Vermögenswertes geltend gemacht, so gilt derjenige als Berechtigter, der von einer Maßnahme gemäß des § 1 als Erster betroffen war.

(3) Liegt ein Antrag nach § 30 vor, so ist der Verfügungsberechtigte verpflichtet, den Abschluss dinglicher Rechtsgeschäfte oder die Eingehung langfristiger vertraglicher Verpflichtungen ohne Zustimmung des Berechtigten zu unterlassen. Ausgenommen sind solche Rechtsgeschäfte, die

- a) zur Erfüllung von Rechtspflichten des Eigentümers, insbesondere bei Anordnung eines Modernisierungs- und Instandsetzungsgebots nach § 177 des Baugesetzbuchs zur Beseitigung der Missstände und zur Behebung der Mängel oder

b) zur Erhaltung und Bewirtschaftung des Vermögenswerts

erforderlich sind. Ausgenommen sind, soweit sie nicht bereits nach den Sätzen 2 und 5 ohne Zustimmung des Berechtigten zulässig sind, ferner Instandsetzungsmaßnahmen, wenn die hierfür aufzuwendenden Koste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als Vermieter nach Rechtsvorschriften zu einer Erhöhung der jährlichen Miete berechtigen. Der Berechtigte ist verpflichte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aufgewendeten Kosten, soweit diese durch eine instandsetzungsbedingte Mieterhöhung nicht bereits ausgeglichen sind, zu erstatten, sobal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bestandskräftig entschieden ist. Satz 2 gilt entsprechend für Maßnahmen der in Satz 2 Buchstabe a bezeichneten Art, die ohne eine Anordnung nach § 177 des Baugesetzbuchs vorgenommen werden, wenn die Kosten der Maßnahmen von der Gemeinde oder einer anderen Stelle nach Maßgabe des § 177 Abs. 4 und 5 des Baugesetzbuchs erstattet werden.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diese Rechtsgeschäfte so zu führen, wie das Interesse des Berechtigten mit Rücksicht auf dessen wirklichen oder mutmaßlichen Willen es erfordert, soweit dem nicht das Gesamtinteresse des vo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geführten Unternehmens entgegensteht; § 678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ist entsprechend anzuwenden, jedoch bleiben die Befugnisse als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r in den Fällen des § 177 des Baugesetzbuchs und der Sätze 3 und 5 sowie nach dem Investitionsgesetz von diesem Satz unberührt. Der Verfügungsberechtigte ist zur Liquidation berechtigt und zur Abwendung des Insolvenzverfahrens nicht verpflichtet, wenn der Berechtigte trotz Aufforderung innerhalb eines Monats einen Antrag auf vorläufige Einweisung nach § 6a nicht stellt oder ein solcher Antrag abgelehnt worden ist. Dies gilt auch bei verspäteter Anmeldung. Die Treuhandanstalt ist zur Abwendung des Insolvenzverfahrens nicht verpflichtet, wenn der Berechtigte bis zum 1. September 1992 keinen Antrag nach § 6a zur vorläufigen Einweisung gestellt hat oder wenn über einen gestellten Antrag bis zum 1. Dezember 1992 nicht entschieden worden ist.

(4) Wird die Anmeldefrist (§ 3 der Anmeldeverordnung) versäumt und liegt keine verspätete Anmeldung vor, kann der Verfügungsberechtigte über das Eigentum verfügen oder schuldrechtliche oder dingliche Verpflichtungen eingehen. Ist über das Eigentum noch nicht verfügt worden, so kann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noch geltend machen. Anderenfalls steht ihm nur noch ein Anspruch auf den Erlös zu. Übernimmt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oder die Bundesanstalt für Immobilienaufgaben oder eine sonstige Behörde des Bundes die einem Verfügungsberechtigten obliegende Verpflichtung zur Auszahlung des Erlöses oder zur Zahlung des Verkehrswertes aus einer mit Zustimmung des Berechtigten erfolgten Veräußerung, bedarf es für die Übertragung dieser Verpflichtung der Zustimmung des Gläubigers nach § 415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nicht. Dies gilt ebenfalls in den Fällen des Anwendungsbereiches des Satzes 3.

(5)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sich vor einer Verfügung bei dem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in dessen Bezirk der Vermögenswert belegen ist, und, soweit ein Unternehmen betroffen ist, bei dem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in dessen Bezirk das Unternehmen seinen Sitz (Hauptniederlassung) hat, zu vergewissern, dass keine Anmeldung im Sinne des Absatzes 3 hinsichtlich des Vermögenswertes vorliegt; diese Pflicht besteht in beiden Fallgruppen auch gegenübe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 3a

(weggefallen)

§ 3b Gesamtvollstreckungsverfahren, Zwangsversteigerungsverfahren

(1) Der Anspruch nach § 3 Abs. 1 Satz 1 wird durch die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über das Vermögen des Verfügungsberechtigten nicht berührt. Dies gilt, außer in den Fällen des § 6 Abs. 6a nicht, wenn ein Unternehmen Gegenstand eines Rückübertragungsanspruchs nach § 6 Abs. 1 Satz 1 ist.

(2) Beschlüsse, durch die die Zwangsversteigerung eines Grundstücks oder Gebäudes angeordnet wird, sowie Ladungen zu Terminen in einem Zwangsversteigerungsverfahren sind dem Berechtigten zuzustellen.

(3) Soll ein Grundstück oder ein Gebäude, für das ein Antrag nach § 30 vorliegt, im Wege der von einem Verfügungsberechtigten (§ 2 Abs. 3) beantragten Teilungsversteigerung nach § 180 des Gesetzes über die Zwangsversteigerung und die Zwangsverwaltung versteigert werden, ist das Zwangsversteigerungsverfahren auf Antrag des Berechtigten (§ 2 Abs. 1) bis zum Eintritt de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en Rückübertragungsantrag einstweilen einzustellen. Die einstweilige Einstellung ist zu versagen, wenn im Falle einer rechtsgeschäftlichen Veräußerung eine Grundstücksverkehrsgenehmigung nach § 2 Abs. 1 Satz 2 Nr. 2 oder 3 der Grundstücksverkehrsordnung nicht erforderlich wäre. Sie kann versagt werden, wenn eine Grundstücksverkehrsgenehmigung nach § 1 Abs. 2 Satz 2 der Grundstücksverkehrsordnung erteilt werden könnte.

(4) Ist die Rückübertragung eines Grundstücks oder Gebäudes nicht mehr möglich, weil es im Wege der Zwangsversteigerung veräußert wurde, kann der Berechtigte vom bisherigen Verfügungsberechtigten die Zahlung eines Geldbetrages in Höhe des Versteigerungserlöses verlangen. Der bisherige Verfügungsberechtigte kann mit Ansprüchen nach § 7 Abs. 2 und § 7a Abs. 2 aufrechnen. Die Zahlung nach Satz 1 steht dem Erlös aus einer Veräußerung des Grundstücks gleich. Dies gilt auch in Ansehung von Ansprüchen des Entschädigungsfonds nach § 7a Abs. 2 Satz 4.

§ 3c Erlaubte Veräußerungen

(1) § 3 Abs. 3 gilt für die Veräußerung von Vermögenswerten der Treuhandanstalt oder eines Unternehmens, dessen sämtliche Anteile sich mittelbar oder unmittelbar in der Hand der Treuhandanstalt o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finden, nicht, wenn sich der Erwerber zur Duldung der Rückübertragung des Vermögenswertes auf den Berechtigten nach Maßgabe dieses Abschnitts verpflichtet. Steht der Vermögenswert im Eigentum eines anderen Verfügungsberechtigten, gilt Satz 1 nur, wenn der Erwerber ein Antragsteller nach § 30 Abs. 1 ist oder wenn der Erwerber eine 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eine von einer solchen Person beherrschte juristische Person des Privatrechts oder eine Genossenschaft ist.

(2) Die Rückübertragung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auch nach Wirksamwerden der Veräußerung erfolgen. Bis zu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unterliegt der Erwerber vorbehaltlich der Bestimmungen des Investitionsvorranggesetzes den Beschränkungen des § 3 Abs. 3.

§ 4 Ausschluss der Rückübertragung

(1) Ein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rechtes oder sonstiger Rechte an Vermögenswerten ist ausgeschlossen, wenn dies von der Natur der Sache her nicht mehr möglich ist.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ist ausgeschlossen, wenn und soweit der Geschäftsbetrieb eingestellt worden ist und die tatsäch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Wiederaufnahme des Geschäftsbetriebs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fehlen. Die Rückgabe des Unternehmens ist auch ausgeschlossen, wenn und soweit ein Unternehmen auf Grund folgender Vorschriften veräußert wurde:

- a)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DDR vom 25. Januar 1990 (GBl. I Nr. 4 S. 16),
- b) Beschluss zur Gründung der Anstalt zu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des Volkseigentums (Treuhandanstalt) vom 1. März 1990 (GBl. I Nr. 14 S. 107),
- c) Treuhandgesetz vom 17. Juni 1990 (GBl. I Nr. 33 S. 300),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9 des Gesetzes zur Beseitigung von Hemmnissen bei der Privatisierung von Unternehmen und zur Förderung von Investitionen vom 22. März 1991 (BGBl. I S. 766),
- d) Gesetz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privater Unternehmen und über Unternehmensbeteiligungen vom 7. März 1990 (GBl. I Nr. 17 S. 141).

Dies gilt nicht,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3 vorliegen.

(2) Die Rückübertragung ist ferner ausgeschlossen, wenn natürliche Personen, Religionsgemeinschaften oder gemeinnützige Stiftungen nach dem 8. Mai 1945 in redlicher Weise an dem Vermögenswert Eigentum oder dingliche Nutzungsrechte erworben haben. Dies gilt bei der Veräußerung vo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nicht, sofern das dem Erwerb zugrundeliegende Rechtsgeschäft nach dem 18. Oktober 1989 ohne Zustimmung des Berechtigten geschlossen worden ist, es sei denn, dass

- a) der Erwerb vor dem 19. Oktober 1989 schriftlich beantragt oder sonst aktenkundig angebahnt worden ist,
- b) der Erwerb auf der Grundlage des § 1 des Gesetzes über den Verkauf volkseigener Gebäude vom 7. März 1990 (GBl. I Nr. 18 S. 157) erfolgte oder
- c) der Erwerber vor dem 19. Oktober 1989 in einem wesentlichen Umfang werterhöhende oder substanzerhaltende Investitionen vorgenommen hat.

(3) Als unredlich ist der Rechtserwerb in der Regel dann anzusehen, wenn er

- a) nicht in Einklang mit den zum Zeitpunkt des Erwerb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den allgemeinen Rechtsvorschriften, Verfahrensgrundsätzen und einer ordnungsgemäßen Verwaltungspraxis stand, und der Erwerber dies wusste oder hätte wissen müssen oder

- b) darauf beruhte, dass der Erwerber durch Korruption oder Ausnutzung einer persönlichen Machtstellung auf den Zeitpunkt oder die Bedingungen des Erwerbs oder auf die Auswahl des Erwerbsgegenstandes eingewirkt hat, oder
- c) davon beeinflusst war, dass sich der Erwerber eine von ihm selbst oder von dritter Seite herbeigeführte Zwangslage oder Täuschung des ehemaligen Eigentümers zu Nutze gemacht hat.

§ 5 Ausschluss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1) Ein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ist gemäß § 4 Abs. 1 insbesondere auch dann ausgeschlossen, wenn Grundstücke und Gebäude

- a) mit erheblichem baulichen Aufwand in ihrer Nutzungsart oder Zweckbestimmung verändert wurden und ein öffentliches Interesse an dieser Nutzung besteht,
- b) dem Gemeingebrauch gewidmet wurden,
- c) im komplexen Wohnungsbau oder Siedlungsbau verwendet wurden,
- d) der gewerblichen Nutzung zugeführt oder in eine Unternehmenseinheit einbezogen wurden und nicht ohne erhebliche Beeinträchtigung des Unternehmens zurückgegeben werden können.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Buchstabe a und d ist di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nur dann ausgeschlossen, wenn die maßgeblichen tatsächlichen Umstände am 29. September 1990 vorgelegen haben.

(3) Änderungen der tatsächlichen Umstände, die einen Ausschlussgrund nach Absatz 1 Buchstabe a bis d begründen, können von den Berechtigten nach bestandskräftigem Abschluss des Verfahrens nicht mehr geltend gemacht werd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Rücknahme und den Widerruf von Verwaltungsakten bleiben unberührt.

§ 6 Rückübertragung von Unternehmen

(1) Ein Unternehmen ist auf Antrag an den Berechtigten zurückzugeben, wenn e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technischen Fortschritts und der allgemein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mit dem enteigneten Unternehmen im Zeitpunkt der Enteignung vergleichbar ist; der Anspruch auf Rückgabe von Anteils- oder Mitgliedschaftsrechten richtet sich gegen die in § 2 Abs. 3 bezeichneten Inhaber dieser Rechte, der Anspruch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gegen den dort bezeichneten Verfügungsberechtigten. Im Zeitpunkt der Rückgabe festzustellend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en oder wesentliche Verbesserungen der Vermögens- oder Ertragslage sind auszugleichen; Schuldner bei wesentlicher Verschlechterung oder Gläubiger bei wesentlicher Verbesserung ist die Treuhandanstalt oder eine andere in § 24 Abs. 1 Satz 1 des D-Markbilanzgesetzes bezeichnete Stelle, wenn sie unmittelbar oder mittelbar a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beteiligt ist. Das Unternehmen ist mit dem enteigneten Unternehmen vergleichbar, wenn das Produkt- oder Leistungsangebot des Unternehmen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technischen und wirtschaftlichen Fortschritts im Grundsatz unverändert geblieben ist oder frühere Produkte oder Leistungen durch andere ersetzt worden sind. Ist das Unternehmen mit einem oder mehreren anderen Unternehmen zusammengefasst worden, so kommt es für die Vergleichbarkeit nur auf diesen Unternehmensteil an.

(1a) Berechtigter bei der Rückgabe oder Rückführung eines Unternehmens nach den §§ 6 und 12 ist derjenige, dessen Vermögenswerte von Maßnahmen gemäß § 1 betroffen sind. Dieser besteht unter seiner Firma, die vor der Schädigung im Register eingetragen war, als in Auflösung befindlich fort, wenn die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vorhandenen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oder Rechtsnachfolger dieser Personen, die mehr als 50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auf sich vereinen und namentlich bekannt sind, einen Anspruch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oder von Anteilen oder Mitgliedschaftsrechten des Rückgabeberechtigten angemeldet haben. Kommt das erforderliche Quorum für das Fortbestehen eines Rückgabeberechtigten unter seiner alten Firma nicht zustande, kann das Unternehmen nicht zurückgefordert werden. Satz 2 gilt nicht für Gesellschaften, die ihr im Beitrittsgebiet belegenes Vermögen verloren haben und hinsichtlich des außerhalb dieses Gebiets belegenen Vermögens als Gesellschaft oder Stiftung werbend tätig sind; in diesem Falle ist Berechtigter nur die Gesellschaft oder Stiftung.

(2)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der Vermögenslage liegt vor,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nach dem D-Markbilanzgesetz oder der für die Rückgabe aufgestellten Schlussbilanz eine Überschuldung oder eine Unterdeckung des für die Rechtsform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ergibt. In diesem Falle stehen dem Unternehmen die Ansprüche nach den §§ 24, 26 Abs. 3 und

§ 28 des D-Markbilanzgesetzes zu; diese Ansprüche dürfen nicht abgelehnt werden. Im Falle des § 28 des D-Markbilanzgesetzes ist das Kapitalentwertungskonto vom Verpflichteten zu tilgen. Der Anspruch nach Satz 2 entfällt, soweit nachgewiesen wird, dass die Eigenkapitalverhältnisse im Zeitpunkt der Enteignung nicht günstiger waren. Der Verfügungsberechtigte kann den Anspruch nach Satz 2 auch dadurch erfüllen, dass er das erforderliche Eigenkapital durch Erlass oder Übernahme von Schulden schafft. Die D-Markeröffnungsbilanz ist zu berichtigen, wenn sich die Ansprüche nach den §§ 24, 26 Abs. 3, § 28 des D-Markbilanzgesetzes auf Grund des Vermögensgesetzes der Höhe nach ändern.

(3) Eine wesentliche Verbesserung der Vermögenslage liegt vor,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D-Markeröffnungsbilanz nach dem D-Markbilanzgesetz oder der für die Rückgabe aufgestellten Schlussbilanz eine Ausgleichsverbindlichkeit nach § 25 des D-Markbilanzgesetzes ergibt und nachgewiesen wird, dass das Unternehmen im Zeitpunkt der Enteignung im Verhältnis zur Bilanzsumme ein geringeres Eigenkapital hatte; bei der Berechn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sind dem Berechtigten, seinen Gesellschaftern oder Mitgliedern entzogene Vermögensgegenstände höchstens mit dem Wert anzusetzen, der ihnen ausgehend vom Zeitwert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Wertabschläge nach dem D-Markbilanzgesetz zukommt. Ein geringeres Eigenkapital braucht nicht nachgewiesen zu werden, soweit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dem Wertansatz von Grund und Boden oder Bauten, die zu keinem Zeitpunkt im Eigentum des Berechtigten, sein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standen, entspricht. Eine nach § 25 Abs. 1 des D-Markbilanzgesetzes entstandene Ausgleichsverbindlichkeit entfällt, soweit eine wesentliche Verbesserung nicht auszugleichen ist.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ist zu erlassen oder in eine Verbindlichkeit nach § 16 Abs. 3 des D-Markbilanzgesetzes umzuwandeln, soweit das Unternehmen sonst nicht kreditwürdig ist. Die D-Markeröffnungsbilanz ist zu berichtigen, wenn sich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auf Grund dieses Gesetzes der Höhe nach ändert.

(4) Eine wesentliche Veränderung der Ertragslage liegt vor, wenn die für das nach dem am 1. Juli 1990 beginnende Geschäftsjahr zu erwartenden Umsätze in Einheiten der voraussichtlich absetzbaren Produkte oder Leistun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llgemein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wesentlich höher oder niedriger als im Zeitpunkt der Enteignung sind. Müssen neue Produkte entwickelt werden, um einen vergleichbaren Umsatz zu erzielen, so besteht in Höhe der notwendigen Entwicklungskosten ein Erstattungsanspruch, es sei denn, das Unternehmen ist nicht sanierungsfähig. Ist der Umsatz wesentlich höher als im Zeitpunkt der Enteignung, insbesondere wegen der Entwicklung neuer Produkte, so entsteht in Höhe der dafür notwendigen Entwicklungskosten, soweit diese im Falle ihrer Aktivierung noch nicht abgeschrieben wären, eine Ausgleichsverbindlichkeit, es sei denn, dass dadurch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der Vermögenslage nach Absatz 2 eintreten würde.

(5) Die Rückgabe der enteigneten Unternehmen an die Berechtigten erfolgt durch Übertragung der Rechte, die dem Eigentümer nach der jeweiligen Rechtsform zustehen. Ist das zurückzugebende Unternehmen mit einem oder mehreren anderen Unternehmen zu einer neuen Unternehmenseinheit zusammengefasst worden, so sind, wenn das Unternehmen nicht entflochten wird, Anteile in dem Wert auf den Berechtigten zu übertragen, der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Absätze 1 bis 4 im Falle einer Entflechtung dem Verhältnis des Buchwertes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zum Buchwert des Gesamtunternehmens entspricht. Die Entflechtung kann nicht verlangt werden, wenn dies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teressen aller Betroffenen einschließlich der Berechtigten wirtschaftlich nicht vertretbar ist; dies ist insbesondere der Fall, wenn durch die Entflechtung Arbeitsplätze in erheblichem Umfang verlorengehen würden. Verbleiben Anteile bei der Treuhandanstalt, insbesondere zum Ausgleich wesentlicher Werterhöhungen, so können diese von den Anteilseignern erworben werden, denen Anteilsrechte nach diesem Gesetz übertragen worden sind.

(5a)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auf Rückgabe kann die Behörde anordnen, dass

- a)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a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auf den Berechtigten übertragen werden oder
- b) das gesamte Vermögen einschließlich der Verbindlichkeiten oder eine Betriebsstätte des Verfügungsberechtigten auf den Berechtigten einzeln oder im Wege der Gesamtrechtsnachfolge übertragen werden oder
- c)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a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auf die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im Verhältnis ihr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übertragen werden.

Wird der Anspruch auf Rückgabe nach Satz 1 Buchstabe c erfüllt, so haftet jeder Gesellschafter oder jedes Mitglied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für vor der Rückgabe entstandene Verbindlichkeiten des Berechtigten bis zur Höhe des Wertes seines Anteils oder Mitgliedschaftsrechts; im Verhältnis zueinander sind die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zur Ausgleichung nach dem Verhältnis des Umfangs ihr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verpflichtet.

(5b)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eines Gesellschafters oder Mitglieds eines Berechtigten oder ihrer Rechtsnachfolger auf Rückgabe entzogener Anteile oder auf Wiederherstellung einer Mitgliedschaft können diese verlangen, dass die Anteile an sie übertragen werden und ihre Mitgliedschaft wiederhergestellt wird; das Handels- oder Genossenschaftsregister ist durch Löschung eines Lösungsvermerks oder Wiederherstellung der Eintragung zu berichtigen. Mit der Rückgabe des Unternehmens in einer der vorbezeichneten Formen sind auch die Ansprüche d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des Berechtigten und ihrer Rechtsnachfolger wegen mittelbarer Schädigung erfüllt.

(5c) Hat ein Berechtigter staatlichen Stellen eine Beteiligung, insbesondere wegen Kreditverweigerung oder der Erhebung von Steuern oder Abgaben mit enteignendem Charakter, eingeräumt, so steht diese den Gesellschaftern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n zu, es sei denn, dass die Voraussetzungen des § 1 Abs. 3 nicht vorliegen. Die Gesellschafter oder deren Rechtsnachfolger können verlangen, dass die staatliche Beteiligung gelöscht oder auf sie übertragen wird. Die beim Erwerb der Beteiligung erbrachte Einlage oder Vergütung ist im Verhältnis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und von den Gesellschaftern oder deren Rechtsnachfolgern a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 2 Abs. 3) zurückzuzahlen, soweit dieser Betrag den Wert der Beteiligung nach § 11 Abs. 1 Satz 1 des D-Markbilanzgesetzes nicht übersteigt; bei Unternehmen, deren Anteile sich ausschließlich bei der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efinden oder befunden haben, ist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stets Verfügungsberechtigter. Nach früherem Recht gebildete Fonds, die weder auf Einzahlungen zurückzuführen noch Rückstellungen im Sinne des § 249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sind, werden, soweit noch vorhanden, dem Eigenkapital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zugerechnet. Ist eine Beteiligung im Sinne des Satzes 1 zurückgekauft worden, so kann der Berechtigte vom Kaufvertrag zurücktreten und die Löschung oder Rückübertragung nach den Sätzen 1 bis 4 verlangen.

(6) Der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kann von jedem Gesellschafter, Mitglied oder einem Rechtsnachfolger und dem Rückgabeberechtigten gestellt werden. Der Antrag des Berechtigten gilt als zugunsten aller Berechtigten, denen der gleiche Anspruch zusteht, erhoben. Statt der Rückgabe kann die Entschädigung gewählt werden, wenn kein Berechtigter einen Antrag auf Rückgabe stellt. Sind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schon vor dem Zeitpunkt der Schädigung des Berechtigten entzogen worden, so gilt der Antrag des ehemaligen Inhabers der Anteile oder der Mitgliedschaftsrechte oder seines Rechtsnachfolgers auf Rückgabe sein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gleichzeitig als Antrag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und gilt sein Antrag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gleichzeitig als Antrag auf Rückgabe d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6a) Ist die Rückgabe nach § 4 Abs. 1 Satz 2 ganz oder teilweise ausgeschlossen, so kann der Berechtigte die Rückgabe derjenigen Vermögensgegenstände verlangen, die sich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in seinem Eigentum befanden oder an deren Stelle getreten sind, soweit die Vermögensgegenstände im Zeitpunkt der Stilllegung des enteigneten Unternehmens zu dessen Vermögen gehörten und das Unternehmen zu diesem Zeitpunkt im Sinne des § 6 Abs. 1 Satz 1 vergleichbar war; eine damals einem Gesellschafter oder Mitglied des geschädigten Unternehmens wegen der Schädigung tatsächlich zugeflossene Geldleistung ist im Verhältnis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und von diesem oder seinem Rechtsnachfolger a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zurückzuzahlen, soweit dieser Betrag den Wert der Beteiligung des Gesellschafters oder des Mitglieds nach § 11 Abs. 1 Satz 1 oder 4 des D-Markbilanzgesetzes abzüglich von nach Satz 2 zu übernehmenden Schulden nicht übersteigt. Die Rückgabe erfolgt gegen Zahlung eines Betrages in Höhe der dem Vermögensgegenstand direkt zurechenbaren Verbindlichkeiten des Verfügungsberechtigten, zu dessen Vermögen der Vermögensgegenstand ab 1. Juli 1990 gehört oder gehört hat, sowie eines Teiles der übrigen Verbindlichkeiten dieses Verfügungsberechtigten; dieser Teil bestimmt sich im Wege der quotalen Zurechnung nach dem Anteil des Wertes des herauszugebenden Vermögensgegenstandes am Gesamtwert des Vermögens dieses Verfügungsberechtigten; ist oder war der Vermögensgegenstand einem Betriebsteil dieses Verfügungsberechtigten zuzuordnen, sind für die quotalen Zurechnung die Verhältnisse zum Zeitpunkt der Stilllegung dieses Betriebsteils maßgeblich; die Zahlungsverpflichtung gilt auch in den Fällen, in denen das enteignete Unternehmen vor dem 1. Juli 1990 stillgelegt worden ist; Verbindlichkeiten, die am 29. März 1991 unmittelbar oder mittelbar dem Bund, Ländern oder Gemeinden oder einer anderen juristischen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zustanden, bleiben außer Betracht. Is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Rückgabe nicht möglich, weil er das Unternehmen oder nach Satz 1 zurückzugebende Vermögensgegenstände ganz oder teilweise veräußert hat oder das Unternehmen nach Absatz 1a Satz 3 nicht zurückgefordert werden kann, so können die Berechtigten vo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Zahlung eines Geldbetrages in Höhe des ihrem Anteil entsprechenden Erlöses aus der Veräußerung verlangen, sofern sie sich nicht für die Entschädigung nach Absatz 7 entscheiden. Ist ein Erlös nicht erzielt worden oder unterschreitet dieser den Verkehrswert, den das Unternehmen oder nach Satz 1 zurückzugebende Vermögensgegenstände im Zeitpunkt der Veräußerung hatten, so können die Berechtigten innerhalb eines Jahres (Ausschlussfrist) den Anspruch auf Zahlung

des Verkehrswertes gerichtlich geltend machen; übernimmt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die Verpflichtung nach Satz 3 und dem vorstehenden Halbsatz, bedarf die Schuldübernahme nicht der Genehmigung des Berechtigten nach § 415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die Ausschlussfrist beginnt frühestens mit dem 1. November 2003, nicht jedoch vor de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gabe und dem Tag des Zugangs einer schriftlichen, mit einem Hinweis auf die Ausschlussfrist und den erzielten Erlös verbundenen Aufforderung des Verfügungsberechtigten an den Berechtigten, den Anspruch geltend zu machen. Für Streitigkeiten nach Satz 4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Ist das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eines Unternehmens entgegen § 3 Abs. 3 Satz 6 und 7 nicht abgewendet worden, so können die Berechtigten Zahlung des Verkehrswerts der einzelnen Vermögensgegenstände abzüglich der nach Satz 2 zu berücksichtigenden Schulden in Höhe des ihrem Anteil entsprechenden Betrags verlangen.

(7) Ist die Rückgabe nach Absatz 1 Satz 1 nicht möglich oder entscheidet sich der Berechtigte innerhalb der in § 8 Abs. 1 bestimmten Frist für eine Entschädigung, so besteht ein Anspruch auf Entschädigung nach Maßgabe des Entschädigungsgesetzes. Ein damals erhaltener Kaufpreis oder Ablösungsbetrag ist im Verhältnis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und vom Betrag der Entschädigung abzusetzen. Leistungen nach Absatz 6a werden auf einen verbleibenden Entschädigungsanspruch voll angerechnet.

(8) Ist in den Fällen des § 1 Abs. 1 Buchstabe d die Rückgabe i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s Gesetzes bereits erfolgt, so kann der Berechtigte verlangen, dass die Rückgabe nach d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überprüft und an dessen Bedingungen angepasst wird.

(9)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und de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as Verfahren und die Zuständigkeit der Behörden oder Stellen für die Durchführung der Rückgabe und Entschädigung von Unternehmen und Beteiligungen zu regeln sowie Vorschriften über die Berechnung der Veränderungen der Vermögens- und Ertragslage der Unternehmen und deren Bewertung zu erlassen.

(10) Das Gericht am Sitz des Rückgabeberechtigten hat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a Satz 2 auf Antrag Abwickler zu bestellen. Vor der Eintragung der Auflösung des Rückgabeberechtigten und seiner Abwickler ist ein im Register zu dem Berechtigten eingetragener Lösungsvermerk von Amts wegen zu löschen. Sind Registereintragungen zu dem Berechtigten nicht mehr vorhanden, so haben die Abwickler ihn, wenn er nach Absatz 1a Satz 2 fortbesteht, als in Auflösung befindlich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anzumelden. Im Übrigen ist für die Abwicklung das jeweils für den Berechtigten geltende Recht anzuwenden. Die Fortsetzung des Berechtigten kann beschlossen werden, solange noch nicht mit der Verteilung des zurückzugebenden Vermögens an die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begonnen ist. Einer Eintragung oder Löschung im Register bedarf es nicht, wenn die zur Stellung des Antrags berechtigten Personen beschließen, dass der Berechtigte nicht fortgesetzt und dass in Erfüllung des Rückgabeanspruchs unmittelbar an die Gesellschafter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geleistet wird.

§ 6a Vorläufige Einweisung

(1) Die Behörde hat Berechtigte nach § 6 auf Antrag vorläufig in den Besitz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einzuweisen, wenn die Berechtigung nachgewiesen ist und kein anderer Berechtigter nach § 3 Abs. 2 Vorrang hat. Wird die Berechtigung nur glaubhaft gemacht, erfolgt die vorläufige Einweisung, wenn

1. keine Anhaltspunkte dafür bestehen, dass die Berechtigten oder die zur Leitung des Unternehmens bestellten Personen die Geschäftsführung nicht ordnungsgemäß ausführen werden, und
2. im Falle der Sanierungsbedürftigkeit die Berechtigten über einen erfolgsversprechenden Plan verfügen.

(2) Die nach § 25 zuständige Behörde entscheidet über die Einweisung durch Bescheid nach § 33 Abs. 4 innerhalb von drei Monate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1 gilt die Einweisung nach Ablauf der Genehmigungsfrist als bewilligt. Die Anfechtungsklage gegen eine Entscheidung der Behörde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Auf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Berechtigten und dem Verfügungsberechtigten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en Pachtvertrag entsprechend anzuwenden, sofern sich der Berechtigte im Falle des Absatzes 1 Satz 1 nicht für einen Kauf entscheidet. Die Behörde hat auf Antrag für den Fall, dass dem Antrag der Berechtigten auf Rückgabe des entzogenen Unternehmens nicht stattgegeben wird, die Pacht oder den Kaufpreis zu bestimmen. Die Pacht oder der Kaufpreis bleiben bis zur bestandskräftigen Entscheidung über die Rückgabe gestundet; sie entfallen, wenn das Unternehmen an den Berechtigten zurückübertragen wird. Der Berechtigte hat dafür einzustehen, dass er und die zur Leitung des Unternehmens bestellten Personen bei der Führung der Geschäfte die Sorgfalt eines ordentlichen und gewissenhaften Geschäftsleiters anwenden.

(3) Der Berechtigte hat Anspruch darauf, dass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nach § 6 Abs. 2 und 4 bereits im Zeitpunkt der vorläufigen Einweisung ausgeglichen wird, soweit das Unternehmen sonst nicht fortgeführt werden könnte. Der Verpflichtete kann die Fortführung des Unternehmens auch in anderer Form, insbesondere durch Bürgschaft, gewährleisten.

(4) Einer Entscheidung der Behörde bedarf es nicht, wenn der Berechtigte und der Verfügungsberechtigte eine vorläufige Nutzung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vereinbaren. Die Vereinbarung ist der Behörde mitzuteilen.

§ 6b Entflechtung

(1) Ein Unternehmen kann zur Erfüllung eines oder mehrerer Ansprüche auf Rückgabe nach § 6 in rechtlich selbständige Unternehmen oder in Vermögensmassen (Betriebsstätten) ganz oder teilweise entflochten werden. § 6 Abs. 1 bis 4 ist auf jede so gebildete Vermögensmasse gesondert anzuwenden. Über die Entflechtung entscheidet die zuständige Behörde auf Antrag der Berechtigten oder des Verfügungsberechtigten durch Bescheid nach § 33 Abs. 4. Der Antragsteller hat der Behörde nachzuweisen, dass er den Antrag auf Entflechtung auch dem zuständigen Betriebsrat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zur Unterrichtung zugeleitet hat.

(2) Die Entflechtung eines Unternehmens ist antragsgemäß zu verfügen, wen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Anteils- oder Mitgliedschaftsrechte allein zustehen und die Berechtigten zustimmen. Bei der Entflechtung von Genossenschaften ist antragsgemäß zu entscheiden, wenn deren Abwickler oder, falls solche nicht bestellt sind, die Generalversammlung mit der für die Auflösung der Genossenschaft erforderlichen Mehrheit der Entflechtung zustimmen. In allen anderen Fällen entscheidet die Behörde nach pflichtgemäßem Ermessen.

(3) Der Behörde ist auf Verlangen die Schlussbilanz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einschließlich des dazu gehörenden Inventars für einen Zeitpunkt vorzulegen, der nicht länger als drei Monate zurückliegt. In der Schlussbilanz und im Inventar sind die Beträge aus der D-Markeröffnungsbilanz und dem dazu gehörenden Inventar jeweils anzugeben.

(4) Das Übergabeprotokoll nach § 33 Abs. 5 muss mindestens folgende Angaben enthalten:

1. den Namen oder die Firma und den Sitz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und der Personen, auf welche die durch die Entflechtung entstehenden Unternehmen, die hinsichtlich ihrer Betriebe und Betriebsteile sowie der Zuordnung der Arbeitsverhältnisse genau zu beschreiben sind, übergehen, sowie deren gesetzliche Vertreter;
2. den Zeitpunkt, von dem an neu geschaffene Anteile oder eine neu geschaffene Mitgliedschaft einen Anspruch auf einen Anteil an dem Bilanzgewinn gewähren, sowie alle Besonderheiten in bezug auf diesen Anspruch;
3. den Zeitpunkt, von dem an die Handlungen des übertragenden Unternehmens als für Rechnung jeder der übernehmenden Personen vorgenommen gelten;
4. die genaue Beschreibung und Aufteilung der Gegenstände des Aktiv- und Passivvermögens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auf die verschiedenen Unternehmen oder Vermögensmassen. Soweit für die Übertragung von Gegenständen im Falle der Einzelrechtsnachfolge in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eine besondere Art der Bezeichnung bestimmt ist, sind diese Regelungen auch hier anzuwenden. Bei Grundstücken ist § 28 der Grundbuchordnung zu beachten. Im Übrigen kann auf Urkunden wie Bilanzen und Inventare Bezug genommen werden, deren Inhalt eine Zuweisung des einzelnen Gegenstands ermöglicht;
5. die Ausgleichsforderung, Ausgleichsverbindlichkeit oder Garantien, die jeder einzelnen Vermögensmasse zugeordnet werden sollen.

(5) Muß für die Zwecke der Rückgabe ein neues Unternehmen errichtet werden, so sind die für die jeweilige Rechtsform maßgeblichen Gründungs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Einer Gründungsprüfung bedarf es nicht; die Prüfungsaufgaben des Registergerichts obliegen insoweit der zuständigen Behörde. Die D-Markeröffnungsbilanz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ist entsprechend der Bildung der neuen Vermögensmassen aufzuteilen; sie gilt mit dem Wirksamwerden der Entflechtung im Sinne der Aufteilung als berichtet.

(6) Kann ein Gläubiger des übertragenden Unternehmens von der Person, der die Verbindlichkeit im Rahmen der Vermögensaufteilung zugewiesen worden ist, keine Befriedigung erlangen, so haften auch die anderen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Personen für diese Verbindlichkeit als Gesamtschuldner. Ist eine Verbindlichkeit keiner der neuen Vermögensmassen zugewiesen worden und lässt sich die Zuweisung auch nicht durch Auslegung

ermitteln, so haften die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Personen als Gesamtschuldner. Eine Haftung tritt nicht ein, wenn die Behörde festgelegt hat, dass für die Erfüllung von Verbindlichkeiten nur bestimmte Personen, auf die Unternehmen oder Betriebsstätten übertragen worden sind, oder die Treuhandanstalt einzustehen hat. Die Treuhandanstalt haftet nur bis zu dem Betrag, den die Gläubiger erhalten hätten, wenn die Entflechtung nicht durchgeführt worden wäre.

(7) Mit der Unanfechtbarkeit des Bescheids nach § 33 Abs. 4 gehen je nach Entscheidung der Behörde die im Übergabeprotokoll bezeichneten Gegenstände entsprechend der dort vorgesehenen Aufteilung entweder einzeln oder jeweils als Gesamtheit auf die bezeichneten Personen über. Gleichzeitig gehen die Anteilsrechte auf die im Bescheid bezeichneten Personen über. Das übertragende Unternehmen erlischt, sofern es nach dem Bescheid nicht fortbestehen soll. Stellt sich nachträglich heraus, dass Gegenstände oder Verbindlichkeiten nicht übertragen worden sind, so sind sie von der Behörde den im Bescheid bezeichneten Personen nach denselben Grundsätzen zuzuteilen, die bei der Entflechtung angewendet worden sind, soweit sich aus der Natur der Sache keine andere Zuordnung ergibt.

(8) Die Behörde ersucht die für die im Entflechtungsbescheid bezeichneten Personen zuständigen Registergerichte und die für die bezeichneten Grundstücke zuständigen Grundbuchämter um Berichtigung der Register und Bücher und, soweit erforderlich, um Eintragung.

(9) Im Falle der Entflechtung bleibt der Betriebsrat im Amt und führt die Geschäfte für die ihm bislang zugeordneten Betriebsteile weiter, soweit sie über die in § 1 des Betriebsverfassungsgesetzes genannte Arbeitnehmerzahl verfügen und nicht in einen Betrieb eingegliedert werden, in dem ein Betriebsrat besteht. Das Übergangsmandat endet, sobald in den Betriebsteilen ein neuer Betriebsrat gewählt und das Wahlergebnis bekannt gegeben ist, spätestens jedoch drei Monate nach Wirksamwerden der Entflechtung des Unternehmens. Werden Betriebsteile, die bislang verschiedenen Betrieben zugeordnet waren, zu einem Betrieb zusammengefasst, so nimmt der Betriebsrat, dem der nach der Zahl der wahlberechtigten Arbeitnehmer größte Betriebsteil zugeordnet war, das Übergangsmandat wahr. Satz 3 gilt entsprechend, wenn Betriebe zu einem neuen Betrieb zusammengefasst werden. Stehen die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Unternehmen im Wettbewerb zueinander, so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ie Beteiligungsrechte des Betriebsrats nicht anzuwenden, soweit sie Angelegenheiten betreffen, die den Wettbewerb zwischen diesen Unternehmen beeinflussen können.

§ 7 Wertausgleich

(1) Der Berechtigte hat, auß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die Kosten für vom Verfügungsberechtigten bis zum 2. Oktober 1990 durchgeführte Maßnahmen für eine Bebauung, Modernisierung oder Instandsetzung des Vermögenswertes zu ersetzen, soweit die Zuordnung der Kosten der Maßnahmen zum Vermögenswert durch den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n nachgewiesen ist und diese Kosten im Kalenderjahr im Durchschnitt 10.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je Einheit im Sinne des § 18 Abs. 2 Satz 3 überschritten haben. Kann eine Zuordnung der Kosten nach Satz 1 nicht nachgewiesen werden, ist jedoch eine Schätzung der Kosten und ihre Zuordnung zum Vermögenswert möglich, sind die Kosten und ihre Zuordnung nach Maßgabe des § 31 Abs. 1 Satz 2 und 3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i der Rückgabe des Vermögenswertes noch feststellbaren Maßnahmen zu schätzen. Von dem nach Satz 1 oder Satz 2 ermittelten Betrag, bei Gebäuden der 10.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Durchschnitt je Einheit überschreitende Betrag, sind jährliche Abschläge von acht vom Hundert bis zu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gabe vorzunehme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ichs- oder Goldmark sind im Verhältnis 2 zu 1 auf Deutsche Mark umzurechnen. Auf Antrag des Berechtigten wir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Vermögenswertes gesondert vorab entschieden, wenn der Berechtigte für einen von dem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festzusetzenden Betrag in Höhe der voraussichtlich zu ersetzenden Kosten Sicherheit nach den Vorschriften des 2. Abschnitts der Hypothekenablöseverordnung geleistet hat. § 34 Abs. 1 Satz 3 bis 6 gilt entsprechend.

(2) Werterhöhungen, die eine natürliche Person, Religionsgemeinschaft oder gemeinnützige Stiftung als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r bis zum 2. Oktober 1990 an dem Vermögenswert herbeigeführt hat, sind vom Berechtigten mit dem objektiven Wert zum Zeitpunk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uszugleichen. Dies gilt entsprechend, wenn der Verfügungsberechtigte das Eigentum an einem Gebäude gemäß § 16 Abs. 3 Satz 2 und 3 verliert.

(3) Soweit Grundpfandrechte zur Finanzierung von Baumaßnahmen im Sinne des § 16 Abs. 5 und 7 zu übernehmen oder Zahlungen mit Rücksicht auf Grundpfandrechte der in § 18 Abs. 2 genannten Art zu leisten sind, entsteht ein Ersatzanspruch nach den Absätzen 1 und 2 nicht. Ist an den Berechtigten ein Grundstück zurückzuübertragen und von diesem Ersatz für ein früher auf Grund eines Nutzungsrechts am Grundstück entstandenes Gebäudeeigentum zu leisten, so entsteht mit Aufhebung des Nutzungsrechts eine

Sicherungshypothek am Grundstück in Höhe des Anspruchs nach den Absätzen 1 und 2 und im Range des bisherigen Nutzungsrechts.

(4) Die Haftung des Berechtigten beschränkt sich auf den zurückzuübertragenden Vermögenswert. Für die Geltendmachung der Haftungsbeschränkung finden die §§ 1990 und 1991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entsprechende Anwendung.

(5) Ist eine öffentlich-rechtliche Gebietskörperschaft oder die Treuhandanstalt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r, so steht der Ersatzanspruch dem Entschädigungsfonds, in den übrigen Fällen dem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n zu. Der Ersatzanspruch steht auch dann dem Entschädigungsfonds zu, wenn eine Gesellschaft verfügungsbefugt ist, deren unmittelbarer oder mittelbarer Anteilseigner mehrheitlich eine öffentlich-rechtliche Gebietskörperschaft oder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ist. § 3 Abs. 3 Satz 4 bleibt unberührt. Wird dem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n ein gezahlter Kaufpreis gemäß § 7a Abs. 1 erstattet, so steht der Ersatzanspruch nach Absatz 1 in Ansehung von Verwendungen des früheren Verfügungsberechtigten dem Entschädigungsfonds zu.

(6) Die Absätze 1 bis 5 finden keine Anwendung auf Rückübertragungsansprüche nach § 6 oder wenn es sich um Verwendungen handelt, mit denen gegen die Beschränkungen des § 3 Abs. 3 verstoßen worden ist.

(7) Der Berechtigte hat gege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sofern nichts anderes vereinbart ist, keinen Anspruch auf Herausgabe der bis zur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gezogenen Nutzungen. Dies gilt nicht für Entgelte, die dem Verfügungsberechtigten ab dem 1. Juli 1994 aus einem Miet-, Pacht- oder sonstigen Nutzungsverhältnis zustehen. Der Herausgabeanspruch nach Satz 2 entsteht mit Bestandskraft des Bescheides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Macht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geltend, so kann der bisherige Verfügungsberechtigte die seit dem 1. Juli 1994 entstandenen

1. Betriebskosten im Sinne der Anlage 3 zu § 27 Abs. 1 der Zweiten Berechnungsverordnung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soweit ihm diese nicht von den Mietern, Pächtern, sonstigen Nutzungsberechtigten oder Dritten erstattet worden sind;
2. Kosten auf Grund von Rechtsgeschäften zur Erhaltung des Vermögenswertes im Sinne des § 3 Abs. 3;
3. Verwaltungskosten in Höhe der in § 26 Abs. 2 und 3 der Zweiten Berechnungsverordnung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bezeichneten Höchstbeträge je Wohnung, gewerblich genutzte Einheit oder gewerblich genutzte Fläche; bei land- und forstwirtschaftlich genutzten Grundstücken in Höhe von 20 Deutsche Mark je Hektar und Jahr

aufrechnen. § 16 Abs. 2 Satz 1 und 2 des Investitionsvorranggesetzes bleibt unberührt.

(7a) Macht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nach Absatz 7 Satz 2 geltend, ist der nach Absatz 1 oder 2 geschuldete Betrag ab dem 9. Juli 1995 mit vier vom Hundert für das Jahr zu verzinsen, sofern nicht der Anspruch dem Entschädigungsfonds zusteht. Die Summe der Zinsbeträge ist auf die Höhe des nach Absatz 7 Satz 2 und 4 Erlangten beschränkt.

(8) Ansprüche nach den Absätzen 2 und 7 sind nicht im Verfahren nach Abschnitt VI geltend zu machen. Die Ansprüche erlöschen, wenn sie nicht binnen eines Jahres seit dem Eintritt der Bestandskraft des Bescheides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schriftlich geltend gemacht worden sind, jedoch nicht vor dem 1. August 1999. Für Streitigkeiten sind die ordentlichen Gerichte zuständig, in deren Bezirk sich der Vermögenswert ganz oder überwiegend befindet.

§ 7a Gegenleistung

(1) Ein vom Verfügungsberechtigten im Zusammenhang mit dem Erwerb des Eigentums an dem zurückzuübertragenden Vermögenswert an eine staatliche Stell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der an einen Dritten gezahlter Kaufpreis ist ihm, auß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oder des § 121 Abs. 6 des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es, auf Antrag aus dem Entschädigungsfonds zu erstatten. Geldbeträge in Reichsmark sind im Verhältnis 20 zu 1, Geldbeträge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im Verhältnis 2 zu 1 auf Deutsche Mark umzustellen.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kann hierüber einen gesonderten Bescheid erlassen. Der Antrag auf Erstattung kann vorbehaltlich des Satzes 5 nur bis zum Ablauf des sechsten Monats nach Eintritt de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gestellt werden (Ausschlussfrist). Die Antragsfrist endet frühestens mit Ablauf des 30. April 1999. Ein Anspruch nach Satz 1 entsteht nicht, wenn der Kaufpreis von einem ehemaligen volkseigenen Betrieb oder einer sozialistischen Genossenschaft geleistet wurde.

(2) Ist dem Berechtigten aus Anlass des Vermögensverlustes eine Gegenleistung oder eine Entschädigung tatsächlich zugeflossen, so hat er diese im Falle der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herauszugeben. Ist demjenigen, der auf der in § 2 Abs. 1 Satz 2 genannten Grundlage Eigentum an dem Vermögenswert erlangt hat, für den anschließenden Verlust oder die anschließende Veräußerung des Vermögenswertes eine Gegenleistung oder Entschädigung tatsächlich zugeflossen, hat der Berechtigte, der Rechtsnachfolger nach § 2 Abs. 1 Satz 3 ist, auch diese a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herauszugeben. Geldbeträge in Reichsmark sind im Verhältnis 20 zu 1, Geldbeträge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im Verhältnis 2 zu 1 auf Deutsche Mark umzustellen. Wurde die Gegenleistung oder die Entschädigung aus dem Staatshaushal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s einem öffentlichen Haushal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em Kreditabwicklungsfonds erbracht, so steht sie dem Entschädigungsfonds zu; dies gilt auch dann, wenn eine Gesellschaft Verfügungsbefugt ist, deren unmittelbarer oder mittelbarer Anteilseigner mehrheitlich eine öffentlich-rechtliche Gebietskörperschaft oder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ist und den zurückzuübertragenden Vermögenswert unentgeltlich erlangt hat. Erfüllungshalber begründete Schuldbuchforderungen erlöschen, soweit sie noch nicht getilgt worden sind.

(2a) Auf Antrag des Berechtigten wir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Vermögenswertes gesondert vorab entschieden, wenn der Berechtigte für einen von dem zuständigen Amt festzusetzenden Betrag in Höhe der voraussichtlich zu erfüllenden Ansprüche Sicherheit nach den Vorschriften des 2. Abschnitts der Hypothekenablöseverordnung geleistet hat. § 34 Abs. 1 Satz 3 bis 6 gilt entsprechend.

(3) Bis zur Befriedigung des Anspruchs nach Absatz 2 Satz 1 steh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gegenüber dem Herausgabeanspruch des Berechtigten ein Recht zum Besitz zu.

(3a) Macht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nach § 7 Abs. 7 Satz 2 geltend, ist der nach Absatz 2 geschuldete Betrag ab dem 9. Juli 1995 mit vier vom Hundert für das Jahr zu verzinsen, sofern nicht der Anspruch dem Entschädigungsfonds zusteht. Die Summe der Zinsbeträge ist auf die Höhe des nach § 7 Abs. 7 Satz 2 und 4 Erlangten beschränkt.

(3b) In den Fällen des § 1 Abs. 6 kann der Verfügungsberechtigte an Stelle des Anspruchs nach Absatz 1 oder 2 Entschädigung nach dem Entschädigungsgesetz wählen, wenn der vom Verfügungsberechtigten oder demjenigen, von dem er seine Rechte ableitet, im Zusammenhang mit dem Erwerb des Eigentums gezahlte Kaufpreis oder die dem Berechtigten aus Anlass des Vermögensverlustes tatsächlich zugeflossene Gegenleistung oder Entschädigung in Reichsmark geleistet wurde. Dies gilt nicht, wenn der Verfügungsberechtigte oder derjenige, von dem er seine Rechte ableitet, gegen die Grundsätze der Menschlichkeit oder Rechtsstaatlichkeit verstoßen, in schwerwiegendem Maße seine Stellung zum eigenen Vorteil oder zum Nachteil anderer mißbraucht oder dem nationalsozialistischen oder dem kommunistischen System in der sowjetisch besetzten Zone od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heblich Vorschub geleistet hat. Der Antrag ist bei dem für die Entscheidung in der Hauptsache zuständigen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 stellen. Er ist vorbehaltlich des Satzes 5 nur bis zum Ablauf des sechsten Monats nach Eintritt de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nach Absatz 2 zulässig (Ausschlussfrist). Die Antragsfrist endet frühestens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5. Wählt der Verfügungsberechtigte Entschädigung, geht der Anspruch nach Absatz 2 auf den Entschädigungsfonds über.

(3c) Eine Entschädigung nach dem Entschädigungsgesetz steht auch demjenigen zu, der nach § 3 Abs. 2 wegen eines Anspruchs nach § 1 Abs. 6 von der Rückübertragung ausgeschlossen ist. Absatz 3b Satz 2, 3, 5 und 6 gilt entsprechend. Der Antrag auf Entschädigung kann vorbehaltlich des Absatzes 3b Satz 5 nur bis zum Ablauf des sechsten Monats nach Eintritt der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mit der die Rückübertragung nach § 3 Abs. 2 abgelehnt wird, gestellt werden (Ausschlussfrist).

(4) Die Absätze 1 bis 3c sind auf Rückübertragungsansprüche nach § 6 nur dann anzuwenden, wenn nicht bereits nach § 8 der Unternehmensrückgabeverordnung oder § 6 Abs. 6a Satz 1 Halbsatz 2 Rückzahlungen festzusetzen sind.

§ 8 Wahlrecht

(1) Soweit inländischen Berechtigten ei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gemäß § 3 zusteht, können sie bis zum Ablauf von sechs Monaten nach Inkrafttreten des Entschädigungsgesetzes statt dessen Entschädigung wählen; hat der Berechtigte seinen Sitz oder Wohnsitz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längert sich die Frist auf fünf Jahre. Ausgenommen sind Berechtigte, deren Grundstücke durch Eigentumsverzicht, Schenkung oder Erbausschlagung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2) Liegt die Berechtigung bei einer Personenmehrheit, kann das Wahlrecht nur gemeinschaftlich ausgeübt werden.

§ 9

(weggefallen)

§ 10 Bewegliche Sachen

Wurden bewegliche Sachen verkauft und können sie nach § 3 Abs. 4 oder § 4 Abs. 2 nicht zurückgegeben werden, steht dem Berechtigten ein Anspruch in Höhe des erzielten Erlöses gegen den Entschädigungsfonds zu, sofern ihm der Erlös nicht bereits auf einem Konto gutgeschrieben oder ausgezahlt wurde.

Abschnitt III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 11 Grundsatz

(1) Die staatliche 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wird auf Antrag des Berechtigten durch Entscheidung der Behörde aufgehoben. Der Berechtigte kann statt dessen unter Verzicht auf sein Eigentum Entschädigung nach dem Entschädigungsgesetz wählen. In diesem Fall steht das Aneignungsrecht dem Entschädigungsfonds zu. Mit dem Wirksamwerden des Verzichts wird der Berechtigte von allen Verpflichtungen frei, die auf den Zustand des Vermögenswertes seit Anordn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zurückzuführen sind. Bei staatlich verwalteten Unternehmen gehen die Gesellschafterrechte oder das Unternehmensvermögen eines Einzelkaufmanns oder einer Gesellschaft im Sinne des § 6 Abs. 1a Satz 4 mit dem Verzicht auf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über. Sie haftet nur mit dem übergebenen Unternehmensvermögen. Erzielt die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einen Verwertungserlös, so gibt sie diesen an den Entschädigungsfonds heraus.

(2) Hat der Berechtigte seinen Anspruch bis zum Ablauf der Anmeldefrist (§ 3 der Anmeldeverordnung) nicht angemeldet, ist der staatliche Verwalter berechtigt, über den verwalteten Vermögenswert zu verfügen. Die Verfügung über den Vermögenswert ist nicht mehr zulässig, wenn der Berechtigte seinen Anspruch am verwalteten Vermögen nach Ablauf der Frist angemeldet hat.

(3) Der Verwalter hat sich vor einer Verfügung zu vergewissern, dass keine Anmeldung im Sinne der Anmeldeverordnung vorliegt.

(4) Dem Berechtigten steht im Falle der Verfügung der Verkaufserlös zu. Wird von dem Berechtigten kein Anspruch angemeldet, ist der Verkaufserlös an die für den Entschädigungsfonds zuständige Behörde zur Verwaltung abzuführen.

(5) Soweit staatlich verwaltete Geldvermögen auf Grund von Vorschriften diskriminierenden oder sonst benachteiligenden Charakters gemindert wurden, wird ein Ausgleich nach § 5 Abs. 1 Satz 6 des Entschädigungsgesetzes gewährt.

(6) Ist für Kontoguthaben oder sonstige privatrechtliche geldwerte Ansprüche, die unter staatlicher Verwaltung standen und zum 1. Juli 1990 auf Deutsche Mark umgestellt worden sind, Hauptentschädigung nach dem Lastenausgleichsgesetz gezahlt worden, gehen diese Ansprüche insoweit auf den Entschädigungsfonds über; die Ausgleichsverwaltung teilt der auszahlenden Stelle die Höhe der Hauptentschädigung mit. Ist das Kontoguthaben schon an den Berechtigten ausgezahlt worden, wird die gewährte Hauptentschädigung nach den Vorschriften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durch die Ausgleichsverwaltung zurückgefordert. Die auszahlende Stelle teilt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und der Ausgleichsverwaltung den an den Berechtigten ausgezahlten Betrag ohne besondere Aufforderung mit (Kontrollmitteilung); die übermittelten Daten dürfen nur für die gesetzlichen Aufgaben der Ausgleichsverwaltung verwendet werden.

§ 11a Beendig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1) Die staatliche 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endet auch ohne Antrag des Berechtigten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2. Das Wahlrecht nach § 11 Abs. 1 Satz 2 muss bis zum Ablauf zweier Monate nach Inkrafttreten des Entschädigungsgesetzes ausgeübt werden. Ist der Vermögenswert ein Grundstück oder ein Gebäude, so gilt der bisherige staatliche Verwalter weiterhin als befugt, eine Verfügung vorzunehmen, zu deren Vornahme er

sich wirksam verpflichtet hat, wenn vor dem 1. Januar 1993 die Eintragung des Rechts oder die Eintragung einer Vormerkung zur Sicherung des Anspruchs bei dem Grundbuchamt beantragt worden ist.

(2) Ist in dem Grundbuch eines bisher staatlich verwalteten Grundstücks oder Gebäudes ein Vermerk über die Anordn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eingetragen, so wird dieser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2 gegenstandslos. Er ist von dem Grundbuchamt auf Antrag des Eigentümers oder des bisherigen staatlichen Verwalters zu löschen.

(3) Von dem Ende der staatlichen Verwaltung an treffen den bisherigen staatlichen Verwalter, bei Unklarheit über seine Person den Landkreis oder die kreisfreie Stadt, in dessen oder deren Bezirk der Vermögenswert liegt, die den Beauftragten nach dem Bürgerlichen Gesetzbuch bei Beendigung seines Auftrags obliegenden Pflichten. Der Verwalter kann die Erfüllung der in Satz 1 genannten Pflichten längstens bis zum 30. Juni 1993 ablehnen, wenn und soweit ihm die Erfüllung aus organisatorischen Gründen nicht möglich ist.

(4) Mit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gehen Nutzungsverhältnisse an einem Grundstück oder Gebäude auf den Eigentümer über.

§ 11b Vertreter des Eigentümers

(1) Ist der Eigentümer eines ehemals staatlich verwalteten Vermögenswertes oder sein Aufenthalt nicht festzustellen und besteht ein Bedürfnis, die Vertretung des Eigentümers sicherzustellen, so bestellt der Landkreis oder die kreisfreie Stadt, in dessen oder deren Bezirk sich der Vermögenswert befindet, auf Antrag der Gemeinde oder eines anderen, d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daran hat, einen gesetzlichen Vertreter des Eigentümers, der auch eine juristische Person sein kann. Sind von mehreren Eigentümern nicht alle bekannt oder ist der Aufenthalt einzelner nicht bekannt, so wird einer der bekannten Eigentümer zum gesetzlichen Vertreter bestellt. Er ist von den Beschränkungen des § 181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befreit. § 16 Abs. 3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findet Anwendung. Im Übrigen gelten die §§ 1785, 1786, 1821 und 1837 sowie die Vorschriften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über den Auftrag sinngemäß.

(2) Ist der Gläubiger einer staatlich verwalteten Forderung oder sein Aufenthalt nicht festzustellen, so ist die Staatsbank Berlin gesetzlicher Vertreter.

(3) Der gesetzliche Vertreter wird auf Antrag des Eigentümers abberufen. Sind mehrere Personen Eigentümer, so erfolgt die Abberufung nur, wenn die Vertretung gesichert ist.

§ 11c Genehmigungsvorbehalt

Über Vermögenswerte, die Gegenstand der in § 1 Abs. 8 Buchstabe b bezeichneten Vereinbarungen sind, darf nur mit Zustimmung des Bundesamtes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verfügt werden. Für Grundstücke, Gebäude und Grundpfandrechte gilt dies nur, wenn im Grundbuch ein Zustimmungsvorbehalt unter Angabe dieser Vorschrift eingetragen ist. Das Grundbuchamt trägt den Zustimmungsvorbehalt nur auf Ersuchen des Bundesamtes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ein. Gegen das Ersuchen können der eingetragene Eigentümer oder seine Erben Widerspruch erheben, der nur darauf gestützt werden kann, dass die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nicht vorliegen. In Fällen, in denen nach Artikel 3 Abs. 9 Satz 2 des Abkommens vom 13. Mai 1992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über die Regelung bestimmter Vermögensansprüche in Verbindung mit Artikel 1 des Gesetzes zu diesem Abkommen vom 21. Dezember 1992 (BGBl. 1992 II S. 1222) der Rechtstitel auf den Bund übergeht und gleichzeitig die staatliche Verwaltung endet, gelten die vorsteh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mit der Maßgabe, dass an die Stelle des Bundesamtes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die für die Verwaltung des betreffenden Vermögensgegenstandes zuständige Bundesbehörde tritt.

§ 12 Staatlich verwaltete Unternehmen und Unternehmensbeteiligungen

Die Modalitäten der Rückführung staatlich verwalteter Unternehmen und Unternehmensbeteiligungen richten sich nach § 6. Anstelle des Zeitpunktes der Enteignung gilt der Zeitpunkt der Inverwaltungnahme.

§ 13 Haftung des staatlichen Verwalters

(1) Ist dem Berechtigten des staatlich verwalteten Vermögenswertes durch eine grobliche Verletzung der Pflichten, die sich aus einer ordnungsgemäßen Wirtschaftsführung ergeben,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oder infolge Verletzung anderer dem staatlichen Verwalter obliegenden Pflichten während der Zeit der staatlichen Verwaltung rechtswidrig ein materieller Nachteil entstanden, ist ihm dieser Schaden zu ersetzen.

(2) Der Schadensersatz ist auf der Grundlage der gesetzlichen Regelungen der Staatshaftung festzustellen und aus dem Entschädigungsfonds zu zahlen.

(3) Dem Entschädigungsfonds steht gegenüber dem staatlichen Verwalter oder der ihm übergeordneten Kommunalverwaltung ein Ausgleichsanspruch zu.

§ 14

(1) Dem Berechtigten stehen keine Schadensersatzansprüche zu, wenn Vermögenswerte nicht in staatliche Verwaltung genommen wurden, weil das zuständige Staatsorgan keine Kenntnis vom Bestehen der sach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Begründ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oder vom Vorhandensein des Vermögenswertes hatte und unter Berücksichtigung der konkreten Umstände nicht erlangen konnte.

(2) Ei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besteht auch dann nicht, wenn dem Berechtigten bekannt war, dass die staatliche Verwaltung über den Vermögenswert nicht ausgeübt wird oder er diese Kenntnis in zumutbarer Weise hätte erlangen können.

§ 14a Werterhöhungen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Für Werterhöhungen, die der staatliche Verwalter aus volkseigenen Mitteln finanziert hat, gilt § 7 entsprechend.

§ 15 Befugnisse des staatlichen Verwalters

(1) Bis zu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ist die Sicherung und ordnungsgemäße Verwaltung des Vermögenswertes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wahrzunehmen.

(2) Der staatliche Verwalter ist bis zu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nicht berechtigt, ohne Zustimmung des Eigentümers langfristige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einzugehen oder dingliche Rechtsgeschäfte abzuschließen. § 3 Abs. 3 Satz 2 und 3 gilt entsprechend.

(3) Die Beschränkung gemäß Absatz 2 entfällt nach Ablauf der Anmeldefrist (§ 3 der Anmeldeverordnung), solange der Eigentümer seinen Anspruch auf den staatlich verwalteten Vermögenswert nicht angemeldet hat.

(4) Der staatliche Verwalter hat sich vor einer Verfügung zu vergewissern, dass keine Anmeldung im Sinne des Absatzes 3 vorliegt.

Abschnitt IV

Rechtsverhältnisse zwischen Berechtigten und Dritten

§ 16 Übernahme von Rechten und Pflichten

(1) Mit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oder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sind die Rechte und Pflichten, die sich aus dem Eigentum am Vermögenswert ergeben, durch den Berechtigten selbst oder durch einen vom Berechtigten zu bestimmenden Verwalter wahrzunehmen.

(2) Mit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oder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oder mit der vorläufigen Einweisung nach § 6a tritt der Berechtigte in alle in bezug auf den jeweiligen Vermögenswert bestehenden Rechtsverhältnisse ein. Dies gilt für vom staatlichen Verwalter geschlossene Kreditverträge nur insoweit, als die darauf beruhenden Verbindlichkeiten im Falle ihrer dinglichen Sicherung gemäß Absatz 9 Satz 2 gegenüber dem Berechtigten, dem staatlichen Verwalter sowie deren Rechtsnachfolgern fortbestünden. Absatz 9 Satz 3 gilt entsprechend.

(3) Dingliche Nutzungsrechte sind mit dem Bescheid gemäß § 33 Abs. 4 aufzuheben, wenn der Nutzungsberechtigte bei Begründung des Nutzungsrechts nicht redlich im Sinne des § 4 Abs. 3 gewesen ist. Mit der Aufhebung des Nutzungsrechts erlischt das Gebäudeeigentum nach § 288 Abs. 4 oder § 292 Abs. 3 des Zivilgesetzbuch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s Gebäude wird Bestandteil des Grundstücks. Grundpfandrechte an einem auf Grund des Nutzungsrechts errichteten Gebäude werden Pfandrechte an den in den §§ 7 und 7a bezeichneten Ansprüchen sowie an dinglichen Rechten, die zu deren Sicherung begründet werden. Verliert der Nutzungsberechtigte durch die Aufhebung des Nutzungsrechts das Recht zum Besitz seiner Wohnung, so treten die Wirkungen des Satzes 1 sechs Monate nach Unanfechtbarkeit der Entscheidung ein.

(4) Fortbestehende Rechtsverhältnisse können nur auf der Grundlage der jeweils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geändert oder beendet werden.

(5) Eingetragene Aufbauhypotheken und vergleichbare Grundpfandrechte zur Sicherung von Baukrediten, die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bestellt wurden, sind in dem sich aus § 18 Abs. 2 ergebenden Umfang zu übernehmen. Von dem so ermittelten Betrag sind diejenigen Tilgungsleistungen abzuziehen, die nachweislich auf das Recht oder eine durch das Recht gesicherte Forderung erbracht worden sind. Im Rahmen einer Einigung zwischen dem Gläubiger des Rechts, dem Eigentümer und dem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ls Vertreter der Interessen des Entschädigungsfonds kann etwas Abweichendes vereinbart werden. Weist der Berechtigte nach, dass eine der Kreditaufnahme entsprechende Baumaßnahme an dem Grundstück nicht durchgeführt wurde, ist das Recht nicht zu übernehmen.

(6)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bestimmt mit der Entscheidung üb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den zu übernehmenden Teil des Grundpfandrechts, wenn nicht der aus dem Grundpfandrecht Begünstigte oder der Berechtigte beantragt, vorab üb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zu entscheiden. In diesem Fall ersuch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ie das Grundbuch führende Stelle um Eintragung eines Widerspruchs gegen die Richtigkeit des Grundbuchs zugunsten des Berechtigten. Wird die staatliche Verwaltung ohne eine Entscheidung des 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beendet, so hat auf Antrag des aus dem Grundpfandrecht Begünstigten oder des Berechtigten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in dessen Bereich das belastete Grundstück belegen ist, den zu übernehmenden Teil der Grundpfandrechte durch Bescheid zu bestimmen. Wird der Antrag nach Satz 3 innerhalb der in § 30a Abs. 3 Satz 1 bestimmten Frist nicht gestellt, bleibt der Eigentümer im Umfang der Eintragung aus dem Grundpfandrecht verpflichtet, soweit die gesicherte Forderung nicht durch Tilgung erloschen ist. Auf die Beschränkungen der Übernahmepflicht nach Absatz 5 Satz 1 und 4 kann er sich in diesem Fall nur berufen, wenn er diese Absicht dem Gläubiger oder der Sparkasse, in deren Geschäftsgebiet das Grundstück belegen ist, bis zum 31. März 1995 schriftlich mitgeteilt hat. Ist die Sparkasse nicht Gläubigerin, ist sie lediglich zur Bestätigung des Eingangs dieser Mitteilung verpflichtet. Der Bescheid ergeht gemeinsam für sämtliche auf dem Grundstück lastenden Rechte gemäß Absatz 5.

(7) Die Absätze 5 und 6 gelten für eingetragene sonstige Grundpfandrechte, die auf staatliche Veranlassung vor dem 8. Mai 1945 oder nach Eintritt des Eigentumsverlustes oder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bestellt wurden, entsprechend, es sei denn, das Grundpfandrecht dient der Sicherung einer Verpflichtung des Berechtigten, die keinen diskriminierenden oder sonst benachteiligenden Charakter hat.

(8) Der Bescheid über den zu übernehmenden Teil der Rechte gemäß den Absätzen 5 bis 7 ist für den Berechtigten und den Gläubiger des Grundpfandrechts selbständig anfechtbar.

(9) Soweit eine Aufbauhypothek oder ein vergleichbares Grundpfandrecht gemäß Absatz 5 oder ein sonstiges Grundpfandrecht gemäß Absatz 7 nicht zu übernehmen ist, gilt das Grundpfandrecht als erloschen. Der Berechtigte tritt in dem Umfang, in dem das Grundpfandrecht von ihm zu übernehmen ist, an die Stelle des Schuldners der dem Grundpfandrecht zugrundeliegenden Forderung. § 417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Soweit der Berechtigte die Schuld nicht nach Satz 2 zu übernehmen hat, erlischt die Forderung, wenn sie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oder sonst auf staatliche Veranlassung zu Lasten einer natürlichen Person begründet worden ist. In diesem Falle erlischt auch der bereits entstandene Zinsanspruch. Handelt es sich um eine Forderung aus einem Darlehen, für das keine staatlichen Mittel eingesetzt worden sind, so ist der Gläubiger vorbehaltlich einer abweichenden Regelung angemessen zu entschädigen.

(10) Die Absätze 5 bis 9 finden keine Anwendung, wenn das Grundstück nach § 6 zurückübertragen wird. Die Absätze 5 bis 9 gelten ferner nicht, wenn das Grundpfandrecht nach dem 30. Juni 1990 bestellt worden ist. In diesem Fall hat der Berechtigte gegen denjenigen, der das Grundpfandrecht bestellt hat, einen Anspruch auf Befreiung von dem Grundpfandrecht in dem Umfang, in dem es gemäß den Absätzen 5 bis 9 nicht zu übernehmen wäre. Der aus dem Grundpfandrecht Begünstigte ist insoweit verpflichtet, die Löschung des Grundpfandrechts gegen Ablösung der gesicherten Forderung und gegen Ersatz eines aus der vorzeitigen Ablösung entstehenden Schadens zu bewilligen.

§ 17 Miet- und Nutzungsrechte

Durch die Rückübertragung vo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od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werden bestehende Miet- oder Nutzungsrechtsverhältnisse nicht berührt. War der Mieter oder Nutzer bei Abschluss des Vertrages nicht redlich im Sinne des § 4 Abs. 3, so ist das Rechtsverhältnis mit dem Bescheid gemäß § 33 Abs. 4 aufzuheben. Dies gilt auch in den Fällen des § 11a Abs. 4. § 16 Abs. 3 Satz 5 gilt entsprechend. Ist ein redlich begründetes Miet- oder Nutzungsverhältnis durch Eigentumserwerb erloschen, so lebt es mit

Bestandskraft des Rückübertragungsbescheides mit dem Inhalt, den es ohne die Eigentumsübertragung seit dem 3. Oktober 1990 gehabt hätte, unbefristet wieder auf.

§ 18 Grundstücksbelastungen

(1)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die nicht nach § 6 erfolgt, hat der Berechtigte für die bei Überführung des Grundstücks in Volkseigentum untergegangenen dinglichen Rechte vorbehaltlich des Absatzes 7 einen in dem Beschei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festzusetzenden Ablösebetrag zu hinterlegen. Der Ablösebetrag bestimmt sich nach der Summe der für die jeweiligen Rechte nach Maßgabe der Absätze 2 bis 5 zu bestimmenden und danach in Deutsche Mark umzurechnenden Einzelbeträge, die in dem Bescheid gesondert auszuweisen sind. Andere als die in den Absätzen 2 bis 4a genannten Rechte werden bei der Ermittlung des Ablösebetrages nicht berücksichtigt. Im Übrigen können auch solche Rechte unberücksichtigt bleiben, die nachweislich zwischen dem Berechtigten und dem Gläubiger einvernehmlich bereinigt sind.

(2) Aufbauhypotheken und vergleichbare Grundpfandrechte zur Sicherung von Baukrediten, die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bestellt wurden, sind mit folgenden Abschlägen von dem zunächst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mzurechnenden Nennbetrag des Grundpfandrechts zu berücksichtigen. Der Abschlag beträgt jährlich für ein Grundpfandrecht

1.	bei Gebäuden mit ein oder zwei Einheiten	
	bis zu 10.000 Mark der DDR	4,0 vom Hundert,
	bis zu 30.000 Mark der DDR	3,0 vom Hundert,
	über 30.000 Mark der DDR	2,0 vom Hundert;
2.	bei Gebäuden mit drei oder vier Einheiten	
	bis zu 10.000 Mark der DDR	4,5 vom Hundert,
	bis zu 30.000 Mark der DDR	3,5 vom Hundert,
	über 30.000 Mark der DDR	2,5 vom Hundert;
3.	bei Gebäuden mit fünf bis acht Einheiten	
	bis zu 20.000 Mark der DDR	5,0 vom Hundert,
	bis zu 50.000 Mark der DDR	4,0 vom Hundert,
	über 50.000 Mark der DDR	2,5 vom Hundert;
4.	bei Gebäuden mit neun und mehr Einheiten	
	bis zu 40.000 Mark der DDR	5,0 vom Hundert,
	bis zu 80.000 Mark der DDR	4,0 vom Hundert,
	über 80.000 Mark der DDR	2,5 vom Hundert.

Als Einheit im Sinne des Satzes 2 gelten zum Zeitpunkt der Entscheidung in dem Gebäude vorhandene in sich abgeschlossene oder selbständig vermietbare Wohnungen oder Geschäftsräume. Von dem so ermittelten Betrag können diejenigen Tilgungsleistungen abgezogen werden, die unstreitig auf das Recht oder eine durch das Recht gesicherte Forderung erbracht worden sind. Soweit der Berechtigte nachweist, dass eine der Kreditaufnahme entsprechende Baumaßnahme an dem Grundstück nicht durchgeführt wurde, ist das Recht nicht zu berücksichtigen. Die Sätze 1 bis 5 gelten für sonstige Grundpfandrechte, die auf staatliche Veranlassung vor dem 8. Mai 1945 oder nach Eintritt des Eigentumsverlustes oder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bestellt wurden, entsprechend, es sei denn, das Grundpfandrecht diene der Sicherung einer Verpflichtung des Berechtigten, die keinen diskriminierenden oder sonst benachteiligenden Charakter hat.

(3) Bei anderen als den in Absatz 2 genannten Grundpfandrechten ist zur Berechnung des Ablösebetrages von dem Nennbetrag des früheren Rechts auszugehen. Absatz 2 Satz 4 gilt entsprechend.

(4) Rechte, die auf die Erbringung wiederkehrender Leistungen aus dem Grundstück gerichtet sind, sind bei der Berechnung des Ablösebetrages mit ihrem kapitalisierten Wert anzusetzen.

(4a) Bei der Berechnung des Ablösebetrages sind auch Forderungen aus Hauszinssteuerabgeltungsdarlehen zu berücksichtigen. Absatz 3 gilt sinngemäß. War die Forderung durch eine Abgeltungslast gesichert, tritt an die Stelle der Hypothek die Gutschrift nach § 3 Abs. 2 oder der Abgeltungsauftrag des Finanzamts nach § 4 der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über die Aufhebung der Gebäudeentschuldungssteuer vom 31. Juli 1942 (RGBl. I S. 503).

(5) Bei der Berechnung der für den Ablösebetrag zu berücksichtigenden Einzelbeträge sind Ausgleichsleistungen auf das Recht oder eine dem Recht zugrundeliegende Forderung oder eine Entschädigung, die der frühere Gläubiger des Rechts vom Staat erhalten hat, nicht in Abzug zu bringen. Dies gilt entsprechend, soweit dem

Schuldner die durch das Recht gesicherte Forderung von staatlichen Stell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lassen worden ist.

(6) Macht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nach § 7 Abs. 7 Satz 2 geltend, ist der nach Absatz 1 bis 5 festzusetzende Ablösebetrag ab dem 9. Juli 1995 mit vier vom Hundert für das Jahr zu verzinsen, sofern nicht der Anspruch dem Entschädigungsfonds zusteht. Die Summe der Zinsbeträge ist auf die Höhe des nach § 7 Abs. 7 Satz 2 und 4 Erlangten beschränkt.

(7) Soweit die zuständige Behörde ohne besondere Ermittlungen davon Kenntnis hat, wer begünstigt im Sinne des § 18b Abs. 1 Satz 1 ist oder inwieweit der Entschädigungsfonds nach Maßgabe des § 18b Abs. 1 Satz 2 Auskehr des Ablösebetrages verlangen kann, kann sie abweichend von Absatz 1 Satz 1 die Verpflichtung des Berechtigten zur Zahlung des Ablösebetrages an den nach § 18b Abs. 1 Satz 1 oder 2 Begünstigten aussprechen. Der Begünstigte informiert die zuständige Behörde umgehend über den Eingang der ihm vom Berechtigten geleisteten Zahlung.

§ 18a Rückübertragung des Grundstücks

Das Eigentum an dem Grundstück geht auf den Berechtigten über, wenn die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unanfechtbar geworden ist und

1. der Ablösebetrag bei der Hinterlegungsstelle, in deren Bezirk das entscheidende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seinen Sitz hat, unter Verzicht auf die Rücknahme hinterlegt oder
2. in den Fällen des § 18 Abs. 7 der Begünstigte befriedigt worden ist oder
3. der Berechtigte für den Ablösebetrag Sicherheit nach den Vorschriften des 2. Abschnitts der Hypothekenablöseverordnung geleistet hat. § 34 Abs. 1 Satz 3 bis 6 gilt mit der Maßgabe entsprechend, dass die Behörde auch Sicherungshypotheken in Höhe der nach § 18 Abs. 1 Satz 2 auszuweisenden Einzelbeträge begründen kann, deren Rangfolge sich nach der ursprünglichen Rangfolge der einzelnen untergegangenen dinglichen Rechte zum Zeitpunkt der Schädigung richtet; daran können sich Sicherungshypotheken für Ansprüche nach § 7 Abs. 1 und § 7a Abs. 2 anschließen.

§ 18b Herausgabe des Ablösebetrages

(1) Der Gläubiger eines früheren dinglichen Rechts an dem Grundstück oder sein Rechtsnachfolger (Begünstigter) kann von der Hinterlegungsstelle die Herausgabe desjenigen Teils des Ablösebetrages, mit dem sein früheres Recht bei der Ermittlung des unanfechtbar festgestellten Ablösebetrages berücksichtigt worden ist, verlangen, soweit dieser nicht an den Entschädigungsfonds oder den Berechtigten herauszugeben ist. Der Anspruch des Begünstigten geht auf den Entschädigungsfonds über, soweit der Begünstigte für den Verlust seines Rechts Ausgleichszahlungen oder eine Entschädigung vom Staat erhalten hat, oder dem Schuldner die dem Recht zugrundeliegende Forderung von staatlichen Stell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lassen worden ist. Der Berechtigte kann den auf ein früheres dingliches Recht entfallenden Teil des Ablösebetrages insoweit herausverlangen, als bei der Festsetzung des Ablösebetrages nicht berücksichtigte Tilgungsleistungen auf das Recht erbracht wurden oder er einer Inanspruchnahme aus dem Recht hätte entgegenhalten können, dieses sei nicht entstanden, erloschen oder auf ihn zu übertragen gewesen. Der Herausgabeanspruch kann nur innerhalb von vier Jahren seit der Hinterlegung geltend gemacht werden. Ist Gläubiger der Entschädigungsfonds, so erfolgt die Herausgabe auf Grund eines Auszahlungsbescheides des Entschädigungsfonds.

(2) Für das Hinterlegungsverfahren gelten die Vorschriften des formellen Hinterlegungsrechts, soweit sich aus diesem Gesetz nicht etwas anderes ergibt. Der zum Zeitpunkt der Überführung des Grundstücks in Volkseigentum im Grundbuch eingetragene Gläubiger eines dinglichen Rechts oder dessen Rechtsnachfolger gilt als Begünstigter, solange nicht vernünftige Zweifel an seiner Berechtigung bestehen.

(3) Eine durch das frühere Recht gesicherte Forderung erlischt insoweit, als der darauf entfallende Teil des Ablösebetrages an den Begünstigten oder den Entschädigungsfonds herauszugeben ist. In den Fällen des § 18 Abs. 2 gilt die Forderung gegenüber dem Berechtigten, dem staatlichen Verwalter sowie deren Rechtsnachfolgern auch hinsichtlich des Restbetrages als erloschen. Handelt es sich um eine Forderung aus einem Darlehen, für das keine staatlichen Mittel eingesetzt worden sind, so ist der Gläubiger vorbehaltlich einer abweichenden Regelung angemessen zu entschädigen.

(4) Der nach Ablauf von fünf Jahren von der Hinterlegung an nicht ausgezahlte Teil des Ablösebetrages ist, soweit nicht ein Rechtsstreit über den Betrag oder Teile hiervon anhängig ist, an den Entschädigungsfonds von Amts wegen abzuführen.

(5) Soweit der Begünstigte vom Staat bereits befriedigt worden ist, geht die zugrundeliegende Forderung auf den Entschädigungsfonds über.

§ 19

(weggefallen)

§ 20 Vorkaufsrecht von Mietern und Nutzern

(1) Mietern und Nutzern von Ein- und Zweifamilienhäusern sowie von Grundstücken für Erholungszwecke, die der staatlichen Verwaltung im Sinne des § 1 Abs. 4 unterlagen oder auf die ei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besteht, wird auf Antrag ein Vorkaufsrecht am Grundstück eingeräumt, wenn das Miet- oder Nutzungsverhältnis am 29. September 1990 bestanden hat und im Zeitpunkt der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fortbesteht. Ein Anspruch nach Satz 1 besteht nicht, wenn das Grundstück oder Gebäude durch den Mieter oder Nutzer nicht vertragsgemäß genutzt wird.

(2) In bezug auf einzelne Miteigentumsanteile an Grundstücken oder Gebäuden, die staatlich verwaltet waren oder zurückzuübertragen sind, besteht ein Anspruch nach Absatz 1 auf Einräumung eines Vorkaufsrechts nur dann, wenn auch die übrigen Miteigentumsanteile der staatlichen Verwaltung im Sinne des § 1 Abs. 4 unterlagen oder zurückzuübertragen sind. Es bezieht sich sowohl auf den Verkauf einzelner Miteigentumsanteile als auch auf den Verkauf des Grundstücks. Die Ausübung des Vorkaufsrechts an einem Miteigentumsanteil ist bei dem Verkauf an einen Miteigentümer ausgeschlossen.

(3) Erstreckt sich das Miet- oder Nutzungsverhältnis auf eine Teilfläche eines Grundstücks, so besteht der Anspruch nach den Absätzen 1 und 2 nur dann, wenn der Anteil der Teilfläche mehr als 50 vom Hundert der Gesamtfläche beträgt. In diesem Falle kann das Vorkaufsrecht nur am Gesamtgrundstück eingeräumt werden. Zur Ermittlung des nach Satz 1 maßgeblichen Anteils sind mehrere an verschiedene Mieter oder Nutzer überlassene Teilflächen zusammenzurechnen.

(4) Mehreren Anspruchsberechtigten in bezug auf ein Grundstück oder einen Miteigentumsanteil steht das Vorkaufsrecht gemeinschaftlich zu. Jeder Anspruchsberechtigte kann den Antrag auf Einräumung des Vorkaufsrechts allein stellen. Der Antrag wirkt auch für die übrigen Anspruchsberechtigten.

(5) Anträge auf Einräumung des Vorkaufsrechts sind im Rahmen des Verfahrens nach Abschnitt VI bei dem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 stellen, das über de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entscheidet. In den Fällen des § 11a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as Grundstück belegen ist.

(6) Das Vorkaufsrecht entsteht, wenn der Bescheid, mit dem dem Antrag nach den Absätzen 1 oder 2 stattgegeben wird, unanfechtbar geworden und die Eintragung im Grundbuch erfolgt ist. Es gilt nur für den Fall des ersten Verkaufs. Ist im Zeitpunkt des Abschlusses des Kaufvertrages eine Entscheidung über einen gestellten Antrag nach den Absätzen 1 oder 2 noch nicht ergangen, erstreckt sich das Vorkaufsrecht auf den nächstfolgenden Verkauf. § 892 im Bürgerlichen Gesetzbuch bleibt im Übrigen unberührt.

(7) Das Vorkaufsrecht ist nicht übertragbar und geht nicht auf die Erben des Vorkaufsberechtigten über. Es erlischt mit der Beendigung des Miet- oder Nutzungsverhältnisses. Dies gilt auch für bereits bestehende Vorkaufsrechte. § 563a Abs. 1 und 2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bleibt unberührt.

(7a) Steht das Vorkaufsrecht mehreren Nutzern gemeinschaftlich zu, gilt der Verkauf eines Grundstücksteils an den Nutzer, dem dieser Grundstücksteil zur alleinigen Nutzung überlassen ist, für die übrigen Nutzer nicht als Vorkaufsfall. Mit dem Erwerb des Eigentums erlischt das Vorkaufsrecht an der erworbenen Fläche.

(8) Im Übrigen sind die §§ 463 bis 472, 875, 1098 Abs. 1 Satz 2 und Abs. 2 sowie die §§ 1099 bis 1102, 1103 Abs. 2 und § 1104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 20a Vorkaufsrecht des Berechtigten

Bei Grundstücken, die nicht zurückübertragen werden können, weil Dritte an ihnen Eigentums- oder dingliche Nutzungsrechte erworben haben, wird dem Berechtigten auf Antrag ein Vorkaufsrecht am Grundstück eingeräumt. Dies gilt nicht, wenn das Grundstück nach den Vorschriften des Investitionsvorranggesetzes erworben worden ist.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ständig, das über de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zu entscheiden hat. Als Vorkaufsfall gilt

nicht der Erwerb des Grundstücks durch den Inhaber eines dinglichen Nutzungsrechts. Im Übrigen ist § 20 Abs. 2, 4, 5 Satz 1, Abs. 6, 7 Satz 1 und Abs. 8 sinngemäß anzuwenden.

§ 21 Ersatzgrundstück

(1) Mieter oder Nutzer von Einfamilienhäusern und Grundstücken für Erholungszwecke, die staatlich verwaltet sind oder auf die ein rechtlich begründeter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geltend gemacht wurde, können beantragen, dass dem Berechtigten ein Ersatzgrundstück zur Verfügung gestellt wird, wenn sie bereit sind, das Grundstück zu kaufen. Der Berechtigte ist nicht verpflichtet, ein Ersatzgrundstück in Anspruch zu nehmen.

(2) (weggefallen)

(3) Dem Antrag nach Absatz 1 Satz 1 ist zu entsprechen, wenn der Berechtigte einverstanden ist, ein in kommunalem Eigentum stehendes Grundstück im gleichen Stadt- oder Gemeindegebiet zur Verfügung steht und einer Eigentumsübertragung keine berechtigten Interessen entgegenstehen. Dies gilt insbesondere, wenn die Mieter und Nutzer erhebliche Aufwendungen zur Werterhöhung oder Werterhaltung des Objektes getätigt haben.

(4) Wertdifferenzen zwischen dem Wert des Ersatzgrundstücks und dem Wert des Grundstücks zum Zeitpunkt der Inverwaltungnahme oder des Entzuges des Eigentumsrechts sind auszugleichen.

(5) Wurde dem Berechtigten eines staatlich verwalteten Grundstücks ein Ersatzgrundstück übertragen, ist der staatliche Verwalter berechtigt, das Grundstück an den Mieter oder Nutzer zu verkaufen.

Abschnitt V Organisation

§ 22 Durchführung de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sowie die Aufgaben in bezug auf den zu bildenden Entschädigungsfonds werden vorbehaltlich des § 29 Abs. 2 von den Ländern Mecklenburg-Vorpommern, Brandenburg,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und Berlin durchgeführt. Bei Entscheidungen über

1. die Entschädigung,
2. (weggefallen)
3. einen Schadensersatzanspruch nach § 13,
4. Wertausgleichs- und Erstattungsansprüche nach den § 7, 7a und 14a,
5. zu übernehmende Grundpfandrechte nach § 16 Abs. 5 bis 9, Ablösebeträge nach § 18 und Sicherheitsleistungen nach § 18a sowie
6. die dem Entschädigungsfonds zustehenden Anteile bei der Erlösauskehr nach § 16 Abs. 1 des Investitionsvorranggesetzes

geschieht dies im Auftrag des Bundes. Für das Verfahren der Abführung von Verkaufserlösen nach § 11 Abs. 4 gilt Satz 2 entsprechend. Die Abwicklung von Vermögensangelegenheiten, die dem früheren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tragen waren, obliegt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Dazu gehören insbesondere ausländische Vermögenswerte außer Unternehmen und Betrieben, Gewinnkonten von 1972 verstaatlichten Unternehmen, an die Stelle von staatlich verwalteten Vermögenswerten getretene Einzelschuldbuchforderungen sowie in diesem Zusammenhang erbrachte Entschädigungsleistungen. Das Bundesamt entscheidet insoweit auch über einen etwaigen Widerspruch innerhalb des Verfahrens abschließend.

§ 23 Landesbehörden

(1) Die Länder errichten Ämter und Landesä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2)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ie Zuständigkeit für Verfahren nach dem Vermögensgesetz, dem Entschädigungsgesetz und dem Ausgleichsleistungsgesetz durch Rechtsverordnung ganz oder teilweise auf eine andere Behörde zu übertragen. Nach der Übertragung kann das zuvor zuständige Amt geschlossen werden. Die Landesregierungen können die Ermächtigung nach Satz 1 durch Rechtsverordnung auf eine von ihnen bestimmte Stelle übertragen.

§ 24 Untere Landesbehörden

Für jeden Landkreis, jede kreisfreie Stadt und für Berlin wird ein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ls untere Landesbehörde eingerichtet. Ein solches Amt kann auch für mehrere Kreise, kreisfreie Städte oder mit landesweiter Zuständigkeit gebildet werden. Die gilt auch dann, wenn die Aufgaben der unteren Landesbehörden nach § 28 Abs. 2 auf die Landkreise oder kreisfreien Städte übertragen wurden.

Fußnote

§ 24 Satz 1 idF d. Bek. v. 9.2.2005 I 205: Sachsen - Abweichung durch § 1 Abs. 2 des Sächsischen Gesetzes zur Ausführung des Vermögensgesetzes (SächsAGVermG) v. 24.8.2000 SächsGVBl. S. 360, zuletzt geändert durch Art. 6 G v. 29.1.2008, mWv 1.8.2008 (vgl. BGBl. I 2011, 842)

§ 25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1) Für jedes Land wird ein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gebildet. Für Entscheidungen über Anträge nach den §§ 6, 6a, 6b und über Grund und Höhe der Entschädigung nach § 6 Abs. 7 ist das Landesamt zuständig. Das Landesamt kann Verfahren, die bei einem ihm nachgeordneten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nhängig sind, an sich ziehen. Es teilt dies dem Amt mit, das mit Zugang der Mitteilung für das Verfahren nicht mehr zuständig ist und vorhandene Vorgänge an das Landesamt abgibt. Nach Satz 2 oder nach Satz 3 zuständige Landesämter können bei Sachzusammenhang vereinbaren, dass die Verfahren bei einem Landesamt zusammengefasst und von diesem entschieden werden.

(2)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ie Zuständigkeit nach Absatz 1 durch Rechtsverordnung auf das jeweils örtlich zuständige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für die Fälle zu übertragen, in denen das zurückzugebende Unternehmen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nach Art und Umfang einen in kaufmännischer Weise eingerichteten Geschäftsbetrieb nicht erforderte oder den Betrieb eines handwerklichen oder sonstigen gewerblichen Unternehmens oder den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zum Gegenstand hatte.

§ 26 Widerspruchsausschüsse

(1) Bei jedem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ird ein Widerspruchsausschuss gebildet; bei Bedarf können mehrere Widerspruchsausschüsse gebildet werden. Der Ausschuss besteht aus einem Vorsitzenden und zwei Beisitzern.

(2) Der Widerspruchsausschuss entscheidet mit Stimmenmehrheit über den Widerspruch. Er trifft seine Entscheidung außer in den Fällen des § 22 Satz 2 weisungsunabhängig.

(3) Über den Widerspruch gegen die Entscheidung über die Höhe der Entschädigung nach dem Entschädigungsgesetz entscheidet das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4) Sind die Aufgaben eines Landesamtes gemäß § 23 Absatz 2 Satz 1 auf eine oberste Landesbehörde übertragen worden, ist gegen deren Entscheidungen ein Widerspruch wie gegen eine entsprechende Entscheidung eines Landesamtes zulässig.

§ 27 Amts- und Rechtshilfe

(1) Alle Behörden und Gerichte haben den in diesem Abschnitt genannten Behörden unentgeltlich Amts- und Rechtshilfe zu leisten. Insbesondere sind die Finanzbehörd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verpflichtet, Auskünfte zu erteilen oder Einsicht in die Akten zu gewähren, soweit es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erforderlich ist.

(2) Liegt dem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ode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eine Mitteilung nach § 317 Abs. 2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vor, übermittelt es dem zuständigen Ausgleichsamt eine Abschrift seiner Entscheidung nach § 33 Abs. 4. Das Ausgleichsamt darf die übermittelten Daten nur zum Zwecke der Rückforderung von Ausgleichsleistungen verwenden. Weitere zu diesem Zweck erforderliche Angaben sind auf Ersuchen des Ausgleichsamtes ebenfalls zu übermitteln. § 32 Abs. 1 Satz 4 bleibt unberührt.

(3) Liegen dem für die Entscheidung nach § 33 zuständigen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ode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Anhaltspunkte

dafür vor, dass dem Berechtigten an den Entschädigungsfonds herauszugebende Gegenleistungen oder Entschädigungen gewährt worden sind, ermittelt es diese Leistungen von Amts wegen. Absatz 2 bleibt unberührt.

(4) Liegen dem für die Entscheidung nach § 33 zuständigen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ode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Anhaltspunkte dafür vor, dass noch offene Forderungen des Staatshaushal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bezug auf ein Grundstück bestehen, das nach § 6 Abs. 6a des Vermögensgesetzes lastenfrei zurückübertragen wurde oder wird, unterrichtet es die für die Abwicklung dieser Forderungen zuständige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über ein durchgeführtes oder anhängiges Verfahren nach diesem Gesetz. Die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ist verpflichtet, dem zuständigen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ode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Auskünfte zu erteilen und Einsicht in die Akten zu gewähren, soweit es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sowie des Entschädigungs- und Ausgleichsleistungsgesetzes erforderlich ist.

§ 28 Übergangsregelungen

(1) Bis zur Errichtung der unteren Landesbehörden werden die Aufgaben dieses Gesetzes von den Landratsämtern oder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wahrgenommen. Die auf der Grundlage der Anmeldeverordnung eingereichten Anmeldungen sind durch die Ä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nach deren Bildung von den Landratsämtern oder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zur weiteren Bearbeitung zu übernehmen.

(2) Die Länder können die Aufgaben der unteren Landesbehörden auch auf Dauer durch die Landratsämter oder die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wahrnehmen lassen.

§ 29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1)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unterstützt und gewährleistet eine einheitliche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2)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entscheidet über Anträge auf Rückübertragung von Vermögenswerten, die de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nach § 20b des Parteiengesetz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Februar 1990 (GBl. I Nr. 9 S. 66),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19. Dezember 2006 (BGBl. I S. 3230), der nach Anlage II Kapitel II Sachgebiet A Abschnitt III des Einigungsvertrages vom 31. August 1990 in Verbindung mit Artikel 1 des Gesetzes vom 23. September 1990 (BGBl. 1990 II S. 885, 1150) fortgilt, unterliegen oder bis zu ihrer Übertragung nach den Vorschriften des Vermögenszuordnungsgesetzes unterlagen.

(3)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entscheidet ab dem 1. Januar 2004 über die vermögensrechtlichen Ansprüche, auf die dieses Gesetz nach § 1 Abs. 6 entsprechend anzuwenden ist. Auf Veranlassung der bislang zuständigen Behörde kann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diese ersuchen, in seiner Vertretung ein Verwaltungsverfahren auch nach dem 31. Dezember 2003 abschließend zu bearbeiten, wenn die beabsichtigte Entscheidung nach § 32 Abs. 1 Satz 1 bis zum 30. Juni 2004 den am Verfahren Beteiligten mitgeteilt werden kann.

(4)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veranlasst die im Rahmen des Aufgebotsverfahrens nach § 33 Abs. 7 erforderliche Veröffentlichung des Aufgebots im Bundesanzeiger.

§ 29a

-

Abschnitt VI Verfahrensregelungen

§ 30 Antrag

(1) Ansprüche nach diesem Gesetz sind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mittels Antrag geltend zu machen. Über den Antrag entscheidet die Behörde, wenn und soweit die Rückgabe zwische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und dem Berechtigten nicht einvernehmlich zustande kommt. Der Antrag auf Rückgabe kann jederzeit zurückgenommen oder für erledigt erklärt werden. Er kann auch auf einzelne Verfahrensstufen beschränkt

werden. Die Anmeldung nach der Anmeldeverordnung gilt als Antrag auf Rückübertragung oder auf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2) In den Fällen des § 6 Abs. 1 und des § 6b können die Parteien beantragen, die Entscheidung oder bestimmte Entscheidungen statt durch die Behörde durch ein Schiedsgericht nach § 38a treffen zu lassen. Die Behörde hat die Parteien auf diese Möglichkeit hinzuweisen, wenn nach ihren Ermittlungen Interessen Dritter durch die Entscheidung nicht berührt werden. Ein Antrag im Sinne des Satzes 1 kann auch noch gestellt werden, wenn das behördliche Verfahren bereits begonnen hat.

(3) Steht der Anspruch in den Fällen des § 1 Abs. 7 im Zusammenhang mit einer verwaltungsrechtlichen Entscheidung, deren Aufhebung nach anderen Vorschriften erfolgt, so ist der Antrag nach Absatz 1 nur zulässig, wenn der Antragsteller eine Bescheinigung der für die Rehabilitierung zuständigen Stelle über die Antragstellung im Rehabilitierungsverfahren vorlegt.

§ 30a Ausschlussfrist

(1) Rückübertragungsansprüche nach den §§ 3 und 6 sowie Entschädigungsansprüche nach § 6 Abs. 7 und § 8 können nach dem 31. Dezember 1992, für bewegliche Sachen nach dem 30. Juni 1993, nicht mehr angemeldet werden. In den Fällen des § 1 Abs. 7 gilt dies nur dann, wenn die Entscheidung, auf der der Vermögensverlust beruht, am 30. Juni 1992 bereits unanfechtbar aufgehoben war. Anderenfalls treten die Wirkungen des Satzes 1 nach Ablauf von sechs Monaten ab Unanfechtbarkeit der Aufhebungsentscheidung ein; in den Fällen russischer Rehabilitierungen treten die Wirkungen des Satzes 1 nach Ablauf von sechs Monaten ab Zugang des Rehabilitierungsbescheides, spätestens nach Ablauf von acht Monaten ab Versendung durch eine deutsche Behörde an den Begünstigten oder seinen Rechtsnachfolger ein. Diese Vorschriften finden auf Ansprüche, die an die Stelle eines rechtzeitig angemeldeten Anspruchs treten oder getreten sind, sowie auf Ansprüche, die nach Artikel 3 Abs. 9 Satz 2 des Abkommens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über die Regelung bestimmter Vermögensansprüche vom 13. Mai 1992 (BGBl. 1992 II S. 1223) in das Vermö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gegangen sind, keine Anwendung.

(2) Anträge auf Anpassung der Unternehmensrückgabe nach § 6 Abs. 8 können nur noch bis zum Ablauf von sechs Monaten nach Inkrafttreten des Registerverfahrenbeschleunigungsgesetzes gestellt werden.

(3) In den Fällen der Beendig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nach § 11a können Entscheidungen nach § 16 Abs. 3, 6 Satz 3, § 17 Satz 2, §§ 20 und 21 nach dem in Absatz 2 genannten Zeitpunkt nicht mehr ergehen, wenn sie bis zu diesem Zeitpunkt nicht beantragt worden sind. Erfolgte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durch bestandskräftigen Bescheid des 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und ist eine Entscheidung über die Aufhebung eines Rechtsverhältnisses der in § 16 Abs. 3 oder § 17 bezeichneten Art oder über den Umfang eines zu übernehmenden Grundpfandrechtes ganz oder teilweise unterblieben, kann sie nach Ablauf der in Satz 1 genannten Frist nicht mehr beantragt werden. § 41 Abs. 6 Satz 1, 2, 4 und 5 gilt entsprechend.

(4) Im Zusammenhang mit Ansprüchen auf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Grundstücken können Anträge auf Einräumung von Vorkaufsrechten nach den §§ 20 und 20a sowie Anträge auf Zuweisung von Ersatzgrundstücken nach § 21 Abs. 1 nach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en Rückübertragungsanspruch nicht mehr gestellt werden. Satz 1 gilt entsprechend, wenn die staatliche Verwaltung durch Bescheid des 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bestandskräftig aufgehoben worden ist. Ist in einem bestandskräftigen Beschei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eine Entscheidung über die Aufhebung eines Rechtsverhältnisses der in § 16 Abs. 3 oder § 17 bezeichneten Art oder über den Umfang eines zu übernehmenden Grundpfandrechtes ganz oder teilweise unterblieben, gilt Absatz 3 Satz 2 entsprechend.

§ 31 Pflichten der Behörde

(1) Die Behörde ermittelt den Sachverhalt von Amts wegen, der Antragsteller hat hierbei mitzuwirken. Soweit die Behörde bei einem auf eine Geldleistung gerichteten Anspruch nach diesem Gesetz die für die Höhe des Anspruchs erheblichen Tatsachen nicht oder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m Aufwand ermitteln kann, hat sie die Höhe des Anspruchs zu schätzen. Dabei sind alle Umstände zu berücksichtigen, die für die Schätzung von Bedeutung sind. Zu schätzen ist insbesondere, wenn der Antragsteller über seine Angaben keine ausreichende Aufklärung zu geben vermag oder weitere Auskünfte verweigert.

(1a) Vergleiche sind zulässig.

(1b) Ist nicht festzustellen, welcher Vermögenswert Gegenstand des Antrags ist, so fordert die Behörde den Antragsteller auf, innerhalb von vier Wochen ab Zugang der Aufforderung nähere Angaben zu machen. Die Frist

kann verlängert werden, wenn dem Antragsteller eine fristgerechte Äußerung aus von ihm nicht zu vertretenden Gründen nicht möglich ist, insbesondere in den Fällen des § 1 Abs. 6. Macht der Antragsteller innerhalb der gesetzten Frist keine näheren Angaben, so wird sein Antrag zurückgewiesen.

(1c) Werden Ansprüche nach § 1 Abs. 6 geltend gemacht, so finden für die Todesvermutung eines Verfolgten § 180 und für den Nachweis der Erbberechtigung § 181 des Bundesentschädigungsgesetzes entsprechende Anwendung.

(1d) In den Fällen des Übergangs von Rechtstiteln nach Artikel 3 Abs. 9 des Abkommens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über die Regelung bestimmter Vermögensansprüche vom 13. Mai 1992 (BGBl. 1992 II S. 1223) spricht eine Vermutung für die Richtigkeit der Rechtstatsachen, die den Entscheidungen in dem Programm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über Ansprüche gege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gemäß dem Bundesgesetz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94-542 vom 18. Oktober 1976 zugrunde gelegt worden sind.

(2) Die Behörde hat die betroffenen Rechtsträger oder staatlichen Verwalter sowie Dritte, deren rechtliche Interessen durch den Ausgang des Verfahrens berührt werden können, über die Antragstellung, auf Antrag unter Übersendung einer Abschrift des Antrags und seiner Anlagen, zu informieren und zu dem weiteren Verfahren hinzuzuziehen. Ist der Vermögenswert im Bereich eines anderen Amtes oder Landes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belegen, so hat sie dieses unverzüglich unter genauer Bezeichnung des Antragstellers und des Vermögenswertes über die Antragstellung zu unterrichten.

(3) Auf Verlangen hat der Antragsteller Anspruch auf Auskunft durch die Behörde über alle Informationen, die zur Durchsetzung seines Anspruches erforderlich sind. Hierzu genügt die Glaubhaftmachung des Anspruches. Die Auskunft ist schriftlich zu erteilen. Wird ein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gestellt, so hat die Behörde dem Antragsteller, wenn er seine Berechtigung glaubhaft macht, zu gestatten, die Geschäftsräume des Unternehmens zu betreten und alle Unterlagen einzusehen, die für seinen Antrag Bedeutung haben können.

(4) Die Behörde ist berechtigt, vom Rechtsträger, derzeitigen Eigentümer, staatlichen Verwalter sowie weiteren mit der Verwaltung von Vermögenswerten Beauftragten umfassende Auskunft zu fordern.

(5) Die Behörde hat in jedem Stadium des Verfahrens auf eine gütliche Einigung zwischen dem Berechtigten und dem Verfügungsberechtigten hinzuwirken. Sie setzt das Verfahren aus, soweit ihr mitgeteilt wird, dass eine gütliche Einigung angestrebt wird. Kommt es zu einer Einigung, die den Anspruch des Berechtigten ganz oder teilweise erledigt, so erlässt die Behörde auf Antrag einen der Einigung entsprechenden Bescheid; § 33 Abs. 5 findet Anwendung. Die Einigung kann sich auf Gegenstände erstrecken, über die nicht im Verfahren nach diesem Abschnitt zu entscheiden ist. Absatz 2 bleibt unberührt. Der Bescheid wird sofort bestandskräftig, wenn nicht der Widerruf innerhalb einer in dem Bescheid zu bestimmenden Frist, die höchstens einen Monat betragen darf, vorbehalten wird.

(6) Haben die Parteien einen Antrag nach § 30 Abs. 2 Satz 1 Halbsatz 1 gestellt, so gibt die Behörde dem Antrag statt, wenn Interessen Dritter im Sinne des Absatzes 2 nicht berührt sind. Die Behörde ist dem Schiedsgericht zur Auskunft über alle Informationen verpflichtet, die das Schiedsgericht für seine Entscheidung benötigt. Sie ist an die Entscheidung des Schiedsgerichts gebunden.

(7) Soweit in diesem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nd bis zum Erlass entsprechender landesrechtlicher Bestimmungen die Vorschriften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des Verwaltungszustellungsgesetzes und des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es anzuwenden.

§ 32 Beabsichtigte Entscheidung, Auskunft

(1) Die Behörde hat dem Antragsteller die beabsichtigte Entscheidung schriftlich mitzuteilen und ihm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binnen eines Monats zu geben. Dabei ist er auf die Möglichkeit der Auskunftserteilung gemäß § 31 Abs. 3 sowie auf das Wahlrecht nach § 6 Abs. 7 oder § 8 hinzuweise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ist eine Abschrift der Mitteilung nach Satz 1 zu übersenden. Liegt der Behörde eine Mitteilung nach § 317 Abs. 2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vor, hat sie dem zuständigen Ausgleichsamt eine Abschrift der beabsichtigten Entscheidung nach Satz 1 zuzustellen.

(2) (weggefallen)

(3) Hat der Antragsteller Auskunft verlangt, kann die Behörde über den Antrag frühestens einen Monat, nachdem dem Antragsteller die Auskunft zugegangen ist, entscheiden.

(4) Entscheidungen und Mitteilungen nach diesem Abschnitt, die eine Frist in Lauf setzen, sind den in ihren Rechten Betroffenen zuzustellen. Dies gilt nicht für die Mitteilung der beabsichtigten Entscheidung nach Absatz 1 Satz 1 und für die Erteilung der Auskunft nach Absatz 3.

(5) Jedem, d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glaubhaft darlegt, können Namen und Anschriften der Antragsteller sowie der Vermögenswert mitgeteilt werden, auf den sich die Anmeldung bezieht. Jeder Antragsteller kann der Mitteilung der ihn betreffenden Angaben nach Satz 1 widersprechen, die dann unbeschadet der nach anderen Vorschriften bestehenden Auskunftsrechte unterbleib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eist jeden Antragsteller mit einer Widerspruchsfrist von zwei Wochen auf diese Möglichkeit hin, sobald erstmals nach Inkrafttreten dieser Vorschrift ein Dritter eine Mitteilung nach Satz 1 beantragt.

§ 33 Entscheidung

(1) Ist die Rückübertragung ausgeschlossen oder hat der Antragsteller Entschädigung gewählt, entscheidet die Behörde über Grund und Höhe der Entschädigung. § 4 des NS-Verfolgtenentschädigungsgesetzes bleibt unberührt.

(2) Wird der Entschädigungsfonds durch eine Entscheidung mit größerer finanzieller Auswirkung belastet, gibt die Behörde zuvor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Die beabsichtigte Entscheidung ist dem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über das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zuleiten. Die Einzelheiten bestimmt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3) Über Schadensersatzansprüche gemäß § 13 Abs. 2 und 3 und § 14 ist eine gesonderte Entscheidung zu treffen; sie ist nicht Voraussetzung fü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od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Entscheidungen über die Höhe der Entschädigung ergehen vorbehaltlich der Kürzungsentscheidung nach § 7 Abs. 3 des Entschädigungsgesetzes.

(4) Über die Entscheidung ist den Beteiligten ein schriftlicher Bescheid zu erteilen und zuzustellen. Der Bescheid ist zu begründen und mit einer Rechtsbehelfsbelehrung zu versehen. § 3a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findet keine Anwendung.

(5) Mit der Entscheidung ist den Beteiligten ein Übergabeprotokoll zuzustellen. Dieses hat Angaben zum festgestellten Eigentums- und Vermögensstatus, zu getroffenen Vereinbarungen sowie zu sonstigen wesentlichen Regelungen in bezug auf die zu übergebenden Vermögenswerte zu enthalten. Bei der Rückgabe von Unternehmen muss das Übergabeprotokoll die in § 6b Abs. 4 bezeichneten Angaben enthalten. § 3a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findet keine Anwendung.

(5a) Übermittelt das Ausgleichsamt der Behörde innerhalb eines Monats nach Zustellung der beabsichtigten Entscheidung einen Bescheid nach § 349 Abs. 3a bis 3c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stellt die Behörde diesen zusammen mi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zu.

(6) Die Entscheidung wird einen Monat nach Zustellung bestandskräftig, wenn kein Widerspruch eingelegt wird. Die §§ 58 und 60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bleiben unberührt. Die Entscheidung kann nach Maßgabe des § 80 Abs. 2 Nr. 4 oder des § 80a Abs. 1 Nr. 1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für sofort vollziehbar erklärt werden.

(7) Kann über einen Antrag nicht entschieden werden, weil die Person, der die Entscheidung zuzustellen wäre, nicht ermittelt werden kann, führt die Behörde ein Aufgebotsverfahren entsprechend § 332a Abs. 2 bis 5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durch. Mit Ablauf der von der Behörde bezeichneten Aufgebotsfrist erlöschen die Rechte aus dem Antrag.

§ 33a Fälligkeit, Verzinsung

(1) Durch die Behörde festgesetzte Zahlungsansprüche sind einen Monat nach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fällig. Steht der Anspruch dem Entschädigungsfonds zu und wird die Rückübertragung nicht angefochten, tritt die Fälligkeit abweichend von Satz 1 zwei Monate nach Zustellung der Entscheidung ein.

(2) Widerspruch und Klage des Berechtigten gegen die Festsetzung eines Zahlungsanspruchs des Entschädigungsfonds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3) Wird ein Zahlungsanspruch des Entschädigungsfonds nicht bis zum Ablauf des Fälligkeitstages erfüllt, ist er mit vier Prozent für das Jahr zu verzinsen.

§ 34 Eigentumsübergang, Grundbuchberichtigung und Löschung von Vermerken über die staatliche Verwaltung

(1) Die Rechte an dem zurückübertragenen Vermögenswert gehen auf den Berechtigten über, wenn

1. die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unanfechtbar geworden ist und
2. der Berechtigte die nach den §§ 7 und 7a festgesetzten Zahlungsansprüche erfüllt oder
3. hierfür Sicherheit nach den Vorschriften des 2. Abschnitts der Hypothekenablöseverordnung geleistet sowie
4. die nach § 349 Abs. 3a oder 3b des Lastenausgleichsgesetzes festgesetzte Sicherheit erbracht hat.

§ 18a bleibt unberührt. Ist an den Berechtigten ein Grundstück oder Gebäude herauszugeben, so kann die Sicherheit auch durch eine vom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 begründende Sicherungshypothek in Höhe des festgesetzten Betrages nebst vier Prozent Zinsen hieraus seit dem Tag der Unanfechtbarkeit d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rangbereiter Stelle erbracht werden, wenn nicht der Berechtigte zuvor Sicherheit auf andere Weise leistet. Die Sicherungshypothek kann mit einer Frist von drei Monaten ab Bestandskraft der Entscheidung über den Zahlungsanspruch gekündigt werden. Die Kündigung durch den Entschädigungsfonds erfolgt durch Bescheid. Aus dem Bescheid findet nach Ablauf der Frist die Zwangsvollstreckung in das Grundstück nach den Vorschriften des Achten Buches der Zivilprozessordnung statt. Satz 1 gilt für die Begründung von dinglichen Rechten entsprechend. Ist die Entscheidung für sofort vollziehbar erklärt worden, so gilt die Eintragung eines Widerspruchs oder einer Vormerkung als bewilligt. Der Widerspruch oder die Vormerkung erlischt, wenn die Entscheidung unanfechtbar geworden ist.

(2)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 und sonstigen dinglichen 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sowie bei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ersucht die Behörde das Grundbuchamt um die erforderlichen Berichtigungen des Grundbuches. Dies gilt auch für die in § 1287 Satz 2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bezeichnete Sicherungshypothek. Gebühren für das Grundbuchverfahren in den durch dieses Gesetz vorgesehenen Fällen werden nicht erhoben.

(3) Personen, deren Vermögenswerte von Maßnahmen nach § 1 betroffen sind, sowie ihre Erben sind hinsichtlich der nach diesem Gesetz erfolgenden Grundstückserwerbe von der Grunderwerbsteuer befreit. Dies gilt nicht für Personen, die ihre Berechtigung durch Abtretung, Verpfändung oder Pfändung erlangt haben, und ihre Rechtsnachfolger.

(4) Die Absätze 1 bis 3 sind auf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und deren Entflechtung anzuwenden, soweit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vorgesehen sind. Das Eigentum an einem Unternehmen oder einer Betriebsstätte geht im Wege der Gesamtrechtsnachfolge über.

(5) Absatz 2 gilt entsprechend für im Schiffsregister eingetragene Schiffe und im Schiffsbauregister eingetragene Schiffsbauwerke.

§ 35 Örtliche Zuständigkeit

(1) Für die Entscheidung über Vermögenswerte in staatlicher Verwaltung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er Antragsteller, im Erbfall der betroffene Erblasser, seinen letzten Wohnsitz hatte. Das gilt auch für Vermögenswerte, die beschlagnahmt und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2) In den übrigen Fällen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er Vermögenswert belegen ist.

(3) In den Fällen des § 3 Abs. 2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usschließlich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er Vermögenswert belegen ist. Das Amt, dessen Zuständigkeit zunächst nach Absatz 1 begründet war, gibt sein Verfahren dorthin ab.

(4) Ist der Antrag an ein örtlich unzuständiges Amt oder an eine andere unzuständige Stelle gerichtet worden, haben diese den Antrag unverzüglich an das zuständige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bzugeben und den Antragsteller zu benachrichtigen.

§ 36 Widerspruchsverfahren

(1) Gegen Entscheidungen des 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kann Widerspruch erhoben werden, der nicht auf einen Verstoß gegen die Bestimmungen über die Zuständigkeit gestützt werden kann. Der Widerspruch ist innerhalb eines Monats nach Zustellung der Entscheidung schriftlich bei dem Amt zu erheben, das die Entscheidung getroffen hat. Der Widerspruch soll begründet werden. Wird dem Widerspruch nicht oder nicht in vollem Umfang abgeholfen, ist er dem zuständigen Widerspruchsausschuss zuzuleiten; im Falle des § 26 Abs. 3 ist der Widerspruch dem Landesamt zuzuleiten. Ein Widerspruchsverfahren findet nicht statt, wenn die Abhilfeentscheidung erstmalig eine Beschwerde enthält.

(2) Kann durch die Aufhebung oder Änderung der Entscheidung ein anderer als der Widerspruchsführer beschwert werden, so ist er vor Abhilfe oder Erlass des Widerspruchsbescheids zu hören.

(3) Der Widerspruchsbescheid ist zu begründen, mit einer Rechtsmittelbelehrung zu versehen und zuzustellen. § 3a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findet keine Anwendung.

(4) Gegen Entscheidungen des Landesamtes und des Bundesamtes findet ein Widerspruchsverfahren nicht statt. Dies gilt nicht für Entscheidungen des Landesamtes, die in gemäß § 23 Abs. 2 auf das Landesamt übertragenen Verfahren ergangen sind.

§ 37 Gerichtliches Verfahren

(1) Für das gerichtliche Verfahren gilt § 36 Abs. 1 Satz 1 entsprechend.

(2) Die Berufung gegen ein Urteil und die Beschwerde gegen eine andere Entscheidung des Gerichts sind ausgeschlossen. Das gilt nicht für die Beschwerde gegen die Nichtzulassung der Revision nach § 135 in Verbindung mit § 133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die Beschwerde gegen Beschlüsse über den Rechtsweg nach § 17a Abs. 2 und 3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und die Beschwerde gegen Beschlüsse nach § 80 Abs. 5 und 7 sowie § 80a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Auf die Beschwerde gegen die Beschlüsse über den Rechtsweg findet § 17a Abs. 4 Satz 4 bis 6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entsprechende Anwendung.

§ 38 Kosten

(1) Das Verwaltungsverfahren einschließlich des Widerspruchsverfahrens ist kostenfrei.

(2) Die Kosten einer Vertretung trägt der Antragsteller. Die Kosten der Vertretung im Widerspruchsverfahren sind dem Widerspruchsführer zu erstatten, soweit die Zuziehung eines Bevollmächtigten zur zweckentsprechenden Rechtsverfolgung notwendig und der Widerspruch begründet war. Über die Tragung der Kosten wird bei der Entscheidung zur Sache mitentschieden.

§ 38a Schiedsgericht, Schiedsverfahren

(1) Die Einsetzung eines Schiedsgerichts für Entscheidungen nach § 6 Abs. 1 oder die vorhergehende Entflechtung nach § 6b erfolgt auf Grund eines Schiedsvertrags zwischen den Parteien (Berechtigter und Verfügungsberechtigter). Das Schiedsgericht besteht aus einem Vorsitzenden und zwei Beisitzern, von denen jede Partei einen ernennt. Der Vorsitzende, der die Befähigung zum Richteramt haben muss, wird von den Beisitzern ernannt.

(2) Auf den Schiedsvertrag und das schiedsgerichtliche Verfahren finden die §§ 1025 bis 1065 der Zivilprozessordnung Anwendung; § 37 Abs. 2 Satz 1 ist nicht anzuwenden. § 31 Abs. 5 gilt entsprechend. Gericht im Sinne des § 1062 der Zivilprozessordnung ist das zuständige Verwaltungsgericht. Gericht im Sinne des § 1065 der Zivilprozessordnung ist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3) Gegen den Schiedsspruch kann innerhalb eines Monats Antrag auf Aufhebung bei dem nach Absatz 2 Satz 3 zuständigen Gericht gestellt werden. Wird der Antrag innerhalb dieser Frist nicht gestellt oder ist er rechtskräftig abgewiesen worden oder haben die Parteien nach Erlass des Schiedsspruchs auf den Aufhebungsantrag verzichtet oder liegt ein Schiedsspruch mit vereinbartem Wortlaut vor, erlässt die Behörde einen Bescheid nach § 33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einem Übergabeprotokoll nach § 33 Abs. 5, in dem der Inhalt des Schiedsspruchs festgestellt wird; dieser Bescheid ist sofort bestandskräftig und hat die Wirkungen des § 34.

§ 39

(Außerkräfttreten anderer Vorschriften)

§ 40 Verordnungsermächtigung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und dem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weitere Einzelheiten des Verfahrens nach den §§ 7, 7a, 16 Abs. 5 bis 9, §§ 18 bis 18b, 20 und 20a und Abschnitt VI, der Sicherheitsleistung oder der Entschädigung zu regeln oder von den Bestimmungen der Hypothekenablöseanordnung vom 14. Juli 1992 (BGBl. I S. 1257) abweichende Regelungen zu treffen.

§ 41 Überleitungsvorschrift

(1) § 7 Abs. 7 Satz 4 Nr. 3 ist für den Zeitraum ab 1. Juli 1994 auf Herausgabeansprüche nach § 7 Abs. 7 Satz 2 anzuwenden, wenn über die Rückgabe des Vermögenswertes am 9. Juli 1995 noch nicht bestandskräftig entschieden ist.

(2) Erklärungen zur Ausübung des Wahlrechts nach § 8 Abs. 1 Satz 1 Halbsatz 2, die zwischen dem 1. Dezember 1997 und dem 27. Oktober 1998 abgegeben wurden, sind als fristgerecht zu behandeln.

(3) § 33a Abs. 2 und § 36 Abs. 1 Satz 5 finden auf Rechtsbehelfsverfahren, die vor dem 27. Oktober 1998 anhängig geworden sind, keine Anwendung.

(4) In Widerspruchsverfahren, die am 1. Januar 2004 anhängig sind oder danach anhängig werden, tritt das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an die Stelle der ansonsten zuständigen Widerspruchsbehörde oder des Widerspruchsausschusses, wenn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geltend gemacht werden, auf die dieses Gesetz gemäß § 1 Abs. 6 entsprechend anzuwenden ist.

(5) Vor dem Inkrafttreten des Zweiten Vermögensrechtsänderungsgesetzes vom 14. Juli 1992 (BGBl. I S. 1257, 1993 I S. 1811) am 22. Juli 1992 erklärte Abtretungen von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die nicht innerhalb von drei Monaten vom 22. Juli 1992 an bei dem Amt od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in dessen Bezirk der betroffene Gegenstand liegt, angezeigt worden sind, sind unwirksam.

(6) Im Rahmen der Aufhebung staatlicher Verwaltungen oder im Rahmen der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einem Grundstück übernommene oder wiedereingetragene dingliche Rechte bleiben von den durch das Zweite Vermögensrechtsänderungsgesetz vom 14. Juli 1992 (BGBl. I S. 1257, 1993 I S. 1811) bewirkten Rechtsänderungen unberührt, wenn der Übernahme oder der Wiedereintragung des Rechts eine Vereinbarung der Beteiligten zugrunde lag. Im Übrigen gelten im Zusammenhang mit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oder der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einem Grundstück bis zum 22. Juli 1992 übernommene Grundpfandrechte in dem Umfang als zum Zeitpunkt der Entscheidung üb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erloschen, in dem sie gemäß § 16 nicht zu übernehmen wären. Im Zusammenhang mit der Rückübertragung von Grundstücken bis zum Inkrafttreten des Zweiten Vermögensrechtsänderungsgesetzes vom 14. Juli 1992 (BGBl. I S. 1257, 1993 I S. 1811) am 22. Juli 1992 wiedereingetragene Grundpfandrechte gelten nur in dem Umfang als entstanden, in dem der daraus Begünstigte gemäß § 18b Abs. 1 Herausgabe des Ablösebetrags verlangen könnte. § 16 Abs. 9 Satz 2 und 3 und § 18b Abs. 3 Satz 2 und 3 gelten für Forderungen, die den in den Sätzen 2 und 3 genannten Grundpfandrechten zugrunde liegen, sinngemäß. Für sonstige gemäß Satz 1 übernommene oder gemäß Satz 3 wiedereingetragene dingliche Rechte gilt § 3 Abs. 1a Satz 8. Sicherheitshypotheken nach § 18 Abs. 1 Satz 3 in der bis zum Inkrafttreten des Zweiten Vermögensrechtsänderungsgesetzes vom 14. Juli 1992 (BGBl. I S. 1257, 1993 I S. 1811) am 22. Juli 1992 geltenden Fassung können mit einer Frist von drei Monaten durch Bescheid des Entschädigungsfonds gekündigt werden. Aus dem Bescheid findet nach Ablauf der Frist die Zwangsvollstreckung in das Grundstück nach den Vorschriften des Achten Buches der Zivilprozessordnung statt.

(7) § 20 Abs. 1 bis 5, 7 und 8 und § 20a gelten vom Inkrafttreten des Registerverfahrenbeschleunigungsgesetzes vom 20. Dezember 1993 (BGBl. I S. 2182) am 25. Dezember 1993 an in der dadurch geänderten Fassung auch für bereits bestehende Vorkaufsrechte. Beträgt bei vor diesem Zeitpunkt begründeten Vorkaufsrechten nach § 20 Abs. 3 der Anteil der Teilfläche, auf die sich das Miet- oder Nutzungsverhältnis erstreckt, nicht mehr als 50 vom Hundert der Gesamtfläche, so beschränkt sich das Vorkaufsrecht auf die Teilfläche, wenn der Eigentümer das Grundstück entsprechend teilt.

문서 번호 38

소련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지원조치

1990 년 6 월 27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재무부

내용:

이 문서는 소련에게 50 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재무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서독의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소련에서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이유는 소련이 자체적인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독이 도와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소련이 당시 안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부족문제도 언급된다. 소련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굳이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서독 연방정부는 소련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독일이 독일통일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이 소련과 다른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무를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소련이 개혁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방의 국가들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소련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독일의 나토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군축과 군사무기감시 그리고 유럽안보협력체제 CSCE 의 제도화 등도 포함되었다. 소련은 독일정부가 지불을 보증하고 독일의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소련에 차관을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서독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담보가 보장되고 차관을 상환하면 서방의 은행과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됨으로 소련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나아가 소련의 개혁정책이 지속될 때에는 서방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 Bundesarchiv, BArch/BK, 01 (212) - 37921 Na 8 NA 5, Protokoll, Anlage B

VII C 4

27. Juni 1990

Die Konditionen des 5 Mrd DM-Kredits an die Außenhandelsbank der UdSSR sind die folgenden:

- I. Betrag: 5 Mrd DM
- Kreditgeber: Konsortium deutscher Banken;
Deutsche Bank und Dresdner Bank als
Konsortialführer
(KfW nimmt mit 400 Mio DM teil)
- Kreditnehmer: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he UdSSR
- Rückzahlung: 78, 84, 90, 96, 102, 108, 114, 120,
126, 132, 138 und 144 Monaten nach dem
Tag der Auszahlung,
d.h.: 1. Rückzahlungsrate 6 1/2 Jahre
nach Auszahlung
- Zinssatz: Libor + 5/8 %

II. Bürgschaftskonditionen des Bundes:

Selbstbehalt der Banken: 10 %

Entgelt: 0,375 v.H. auf den jeweils ausstehenden Kapital-
betrag

GL 21 / Av 2

GL 42 / Av 42

1/20

Wirtschaftlich-finanzielle Hilfsmaßnahmen für die Sowjetunion

- Westen steht vor politischer Herausforderung und öffentlicher Erwartung, positives Signal zu geben, daß er der SU auf ihrem Reformweg in Richtung Marktwirtschaft mit Rat und Tat zur Seite steht.
- Gründe wirtschaftlicher Schwierigkeiten und Liquiditätsengpässe der SU vielfältig.
 - = Erbschaft eines ineffizienten Zentralplansystems, das Ressourcen fehlgeleitet und Privatinitiative gelähmt hat.
 - = Unzureichende Reformschritte u.a. in der Landwirtschaft: Deshalb anhaltend hoher Getreideimportbedarf (insb. aus USA und Kanada!).
 - = Nicht genügend durchdachte Reformschritte: Dezentralisierung der Unternehmensentscheidungen im Außenhandel, deshalb zunehmende Importe ohne ausreichende Devisendeckung.
 - = Weltkonjunkturelle Gründe: Einbruch der Rohöl- und Erdgaspreise praktisch mit Amtsantritt Gorbatschows - Einnahmenausfälle durch Kredite überbrückt.
- Daraus folgt: Derzeitige sowjetische Wirtschafts- und Finanzlage nicht etwa ausgelöst durch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deshalb kein "deutsches Problem". Unsere jetzige Initiative - gemeinsam mit F - bedeutet deshalb nicht, daß wir Kosten der deutschen Vereinigung auf andere Partner abwälzen. (Exkurs: Selbstverständlich stehen wir gerade für Lieferverpflichtungen der DDR gegenüber RGW-Partnern und Unterhalt sowjetischer Streitkräfte in DDR).
- Allerdings unser und gesamtwestliches Interesse, daß Politik Gorbatschows fortgesetzt wird und uns ein dem "Neuen Denken" verpflichteter Partner in der SU erhalten bleibt.
 - = Demokratisierung und Menschenrechte in Mittel-, Ost- und Südosteuropa
 - =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 2 + 4 - Hinnahme deutscher NATO-Mitgliedschaft
 - = Weitere Maßnahme der Abrüstung und Rüstungskontrolle (Wien I und START noch in diesem Jahr!)
 - = Europäische Sicherheitsarchitektur - KSZE-Institutionalisierung
 - = Lösung regionaler Konflikte (bisher Afghanistan, Süd-Afrika, Mittelamerika, Zukunftsaufgabe: Kuba).
- Angesichts Kumulierung sowjetischer Rückzahlungsverpflichtungen Ende Juni hat sowjetische Führung um sofortige Gewährung eines ungebundenen Finanzkredits eines deutschen Bankenkonsortiums mit Bundesbürgschaft gebeten. Wir dazu bereit - unter Vorab-Information unserer westlichen Partner.

- Kreditgewährung angesichts bisheriger Hartwährungsverschuldung (lt. OECD Ende 1989: 49 Mrd. \$, zum Vergleich: Polen 42 Mrd. \$)) und langfristiger Bonität der SU (Rohstoffexporteur!) gerechtfertigt - keine Wiederholung Polen/Gierek.

- Kreditmittel werden nicht in "Faß ohne Boden" fließen, sondern für fällige Rückzahlungen verwandt: Sie kommen damit im Endeffekt den Aktionären von Banken und Firmen westlicher Länder zugute.

- Bei Nicht-Rückzahlung dieser Fälligkeiten Ende Juni wären Schadensfälle bei staatlichen Exportkreditversicherungen (bei uns Hermes) nicht ausgeschlossen gewesen: Diese hätten aus Haushaltsmitteln abgedeckt werden müssen. Demgegenüber vorzuziehen Bundesbürgschaft, die jetzt den Steuerzahler nichts kostet und ihn künftig nicht zu belasten braucht.

- Derartige "Feuerwehraktion" aber nicht beliebig wiederholbar. Deshalb langfristige Hilfe des Westens erforderlich. Dabei angesichts der Größe der Aufgaben und Hilfsnotwendigkeiten Zusammenwirken aller westlichen Partner der SU gefordert (Gorbatschow: "Breites Konsortium").

- Selbstverständliche Voraussetzung: Fortsetzung des sowjetischen Reformprozesses in Richtung Marktwirtschaft: Dazu kürzlicher Grundsatzbeschluß des Obersten Sowjets, verbunden mit Auftrag an Regierung, Reformprogramm bis September entscheidend zu verbessern.

- Auftrag des ER Dublin: Kommission soll zusammen mit Weltbank, IWF, OECD usw. mit SU konkrete Hilfsnotwendigkeiten zu sondieren. Wirtschaftsgipfel sollte sich diesen Auftrag zueigen machen (Vorbild: EG-Koordinierung der Gruppe der 24).

- Zusätzlich erforderlich - und zwar in Houston - politische Grundsatzentscheidungen.
 - = Keine lange Forderungsliste sowjetischer Reformschritte, bevor Westen überhaupt reagiert, sondern Begleitung konkreter Reformen durch wirksame Hilfen (stufenweises Vorgehen).
 - = Keine bloßen Summen (die in Medien zirkulierenden Summen nicht von uns genannt!), sondern Verbindung mit vernünftiger Konditionalität in politischer und wirtschaftlicher Hinsicht sowie Beachtung sozialer Faktoren (Versorgung der Bevölkerung/Streikgefahr).

문서 번호 39

무역과 자본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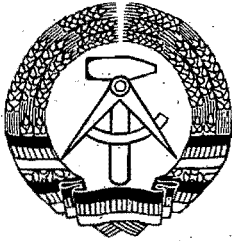
1990 년 6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최고인민회의, 독일연방은행, 동독 내각 각료회의

내용:

이 법안은 화폐통합과정에서 자본과 금융거래를 규정하는 것으로 총 네 파트로 구성되었다: 1. 법률 규정과 실천, 2. 보충조항, 3. 형사처벌과 감독에 관한 규정, 4. 결론과 과도기규정. 제 1 부에서는 일반적인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물자거래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그리고 금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거래제한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이 법은 나아가 거래제한과 거래 허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범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9, S. 515-524, Ausgabetag 09.07.1990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515

1990

Berlin, den 9. Juli 1990

Ergeboten am

31. JULI 1990

Universitäts-
bibliothek

Teil I Nr. 39

Tag	Inhalt	Seite
28. 6. 90	Gesetz über den Außenwirtschafts-, Kapital- und Zahlungsverkehr – GAW	515
28. 6. 90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Zivilgesetzbuches der DDR (1. Zivilrechtsänderungsgesetz)	524
29. 6. 90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ordnung, des Einführungsgesetzes zum Strafgesetzbuch und zur Strafprozeßordnung, des Gesetzes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des Strafregistergesetzes, des Strafvollzugsgesetzes und des Paßgesetzes (6. Strafrechtsänderungsgesetz)	526
21. 6. 90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DR zur Sportförderung	541
27. 6. 90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vom 22. März 1984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OWVO – (GBl. I Nr. 14 S. 173) i. d. F. der Verordnung vom 14. Dezember 1988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1.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Einführungsgesetz zum StGB – Verfolgung von Verfehlungen – und der Verordnung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OWVO – (Änderungsverordnung) (GBl. I Nr. 29 S. 347)	542
27. 6. 90	Verordnung über di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	543
27. 6. 90	Verordnung über die Tilgung der Anteilsrechte von Inhabern mit Wohnsitz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 der Altguthaben-Ablösungs-Anleihe	543
13. 6. 90	Verordnung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Prei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öffentliche Aufträge	544
13. 6. 90	Bekanntmachung	545
27. 6. 90	Bekanntmachung über die Aufhebung der Verordnungen über das Statut des Forschungsrates und über Zentrale Arbeitskreise für Forschung und Technik	546
15. 6. 90	Anordnung über die Aufhebung einer Rechtsvorschrift auf dem Gebiet der Land-, Forst- und Nahrungsgüterwirtschaft	546
	Berichtigung zum Gesetz zur Änderung des Vereinigungsgesetzes	546

**Gesetz
über den Außenwirtschafts-, Kapital- und
Zahlungsverkehr
– GAW –
vom 28. Juni 1990**

Die Volkskammer der DDR hat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Erster Teil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Erster Abschnitt

Allgemeine Vorschriften

§ 1

Grundsatz

(1) Der Waren-, Dienstleistungs-, Kapital-, Zahlungs- und sonstige Wirtschaftsverkehr mit fremden Währungsgebieten sowie der Verkehr mit Auslandswerten und Gold zwischen Gebietsansässigen (Außenwirtschaftsverkehr) ist grundsätzlich frei. Er unterliegt den Einschränkungen, die dieses Ge-

setz enthält oder die durch Rechtsvorschrift aufgrund dieses Gesetzes bestimmt werden.

(2) Unberührt bleiben Regelungen in anderen Gesetzen und Rechtsvorschriften sowie zwischenstaatlichen Vereinbarungen, denen die DDR angehört.

§ 2

**Art und Ausmaß von Beschränkungen
und Handlungspflichten**

(1) Soweit in diesem Gesetz Beschränkungen zugelassen sind, kann durch Rechtsvorschrift bestimmt werden, daß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allgemein oder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1. einer Genehmigung bedürfen oder
2. verboten sind.

(2) Beschränkungen sind nach Art und Umfang auf das Maß zu begrenzen, das notwendig ist, um den in der Ermächtigung angegebenen Zweck zu erreichen. Sie sind so zu gestalten, daß in die Freiheit d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so wenig wie möglich eingegriffen wird. Beschränkungen dürfen abgeschlossene Verträge nur berühren, wenn der angestrebte Zweck erheblich gefährdet wird.

(3) Beschränkungen sind aufzuheben, sobald und soweit die Gründe, die ihre Anordnung rechtfertigten, nicht mehr vorliegen.

(4) Soweit nach diesem Gesetz selbständige Handlungspflichten begründet werden können, gelten die Absätze 2 und 3 entsprechend.

§ 3

Erteilung von Genehmigungen

(1) Bedürfen Rechtsgeschäfte oder Handlungen nach einer Vorschrift dieses Gesetzes oder einer zu diesem Gesetz erlassenen Rechtsvorschrift einer Genehmigung, so ist die Genehmigung zu erteilen, wenn zu erwarten ist, daß die Vornahme des Rechtsgeschäfts oder der Handlung den Zweck, dem die Vorschrift dient, nicht oder nur unwesentlich gefährdet. In anderen Fällen kann die Genehmigung erteilt werden, wenn das volkswirtschaftliche Interesse an der Vornahme des Rechtsgeschäfts oder der Handlung die damit verbundene Beeinträchtigung des bezeichneten Zwecks überwiegt.

(2) Die Erteilung der Genehmigungen kann von sachlichen und persönlichen Voraussetzungen abhängig gemacht werden. Ist im Hinblick auf den Zweck, dem die Vorschrift dient, die Erteilung von Genehmigungen nur in beschränktem Umfang möglich, so sind die Genehmigungen in der Weise zu erteilen, daß die gegebenen Möglichkeiten volkswirtschaftlich zweckmäßig ausgenutzt werden können. Gebietsansässige, die durch eine Beschränkung in der Ausübung ihres Gewerbes besonders betroffen werden, können bevorzugt berücksichtigt werden.

§ 4

Begriffsbestimmungen

(1)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1. Wirtschaftsgebiet: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 Währungsgebiet:
das Gebiet, in dem die Deutsche Mark als Währung gilt;
3. fremde Währungsgebiete:
alle Gebiete außerhalb des Währungsgebiets;
4. Gebietsansässige:
natürliche Personen mit Wohnsitz oder gewöhnlichem Aufenthalt im Wirtschaftsgebiet, juristische Personen und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mit Sitz oder Ort der Leitung im Wirtschaftsgebiet; Zweigniederlassungen Gebietsfremder im Wirtschaftsgebiet gelten als Gebietsansässige, wenn sie hier ihre Leitung haben und für sie eine gesonderte Buchführung besteht; Betriebsstätten Gebietsfremder im Wirtschaftsgebiet gelten als Gebietsansässige, wenn sie hier ihre Verwaltung haben;
5. Gebietsfremde:
natürliche Personen mit Wohnsitz oder gewöhnlichem Aufenthalt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juristische Personen und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mit Sitz oder Ort der Leitung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Zweigniederlassungen Ge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gelten als Gebietsfremde, wenn sie dort ihre Leitung haben und für sie eine gesonderte Buchführung besteht; Betriebsstätten Ge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gelten als Gebietsfremde, wenn sie dort ihre Verwaltung haben.

(2)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ferner

1. Auslandswerte:
unbewegliche Vermögenswerte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Forderungen in Deutscher Mark gegen Gebietsfremde, auf ausländische Währung lautende Zahlungsmittel, Forderungen und Wertpapiere;
2. Waren:
bewegliche Sachen, die Gegenstand des Handelsverkehrs sein können, und Elektrizität; ausgenommen sind Wertpapiere und Zahlungsmittel;
3. Ausfuhr:
das Verbringen von Sachen und Elektrizität aus dem Wirtschaftsgebiet nach fremden Währungsgebieten;
4. Einfuhr:
das Verbringen von Sachen und Elektrizität aus fremden Währungsgebieten in das Wirtschaftsgebiet; als Einfuhr

gilt auch das Verbringen aus einem Zollfreigebiet oder Zollverkehr in den freien Verkehr des Wirtschaftsgebiets, wenn die Sachen aus fremden Währungsgebieten in das Zollfreigebiet oder den Zollverkehr verbracht worden waren;

5. Durchfuhr:
die Beförderung von Sachen aus fremden Währungsgebieten durch das Wirtschaftsgebiet, ohne daß die Sachen in den freien Verkehr des Wirtschaftsgebiets gelangen;
6. Gold:
Feingold und Legierungsgold in Form von Barren oder Halbmaterial sowie außer Kurs gesetzte oder nicht mehr kursfähige Goldmünzen ohne anerkannten Sammlerwert;
7. Wertpapiere:
alle Wertpapiere im Sinne des § 1 Abs. 1 des Gesetzes über die Verwahrung und Anschaffung von Wertpapieren (Depotgesetz) gemäß § 12 des Gesetzes vom 21. Juni 1990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Bl. I Nr. 34 S. 357); als Wertpapiere gelten auch Anteile an einem Wertpapiersammelbestand oder an einer Sammelschuldbuchforderung; Recht auf Lieferung oder Zuteilung von Wertpapieren stehen den Wertpapieren gleich;
8. inländische Wertpapiere:
Wertpapiere, die ein Gebietsansässiger oder vor dem 9. Mai 1945 eine Person mit Wohnsitz oder Sitz im Territorium des jetzigen Währungsgebietes ausgestellt hat;
9. ausländische Wertpapiere:
Wertpapiere, die ein Gebietsfremder ausgestellt hat, soweit sie nicht nach Ziffer 8 inländische Wertpapiere sind.

§ 5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1) Im Sinne dieses Gesetzes gelten

1. gebietsansässige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Gebietsfremder sowie gebietsfremde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Gebietsansässiger als rechtlich selbständig; mehrere gebietsansässige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desselben Gebietsfremden gelten als ein Gebietsansässiger.
2. Handlungen, die von oder gegenüber solchen Zweigniederlassungen oder Betriebsstätten vorgenommen werden, als Rechtsgeschäfte, soweit solche Handlungen im Verhältnis zwischen natürlichen oder juristischen Personen oder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Rechtsgeschäfte wären.

(2) Rechtsvorschriften, die aufgrund einer in diesem Gesetz enthaltenen Ermächtigung ergehen, können vorschreiben, daß

1. gebietsansässige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desselben Gebietsfremden abweichend von Abs. 1 Ziff. 1 Halbsatz 2 jeweils für sich als Gebietsansässige,
2. mehrere gebietsfremde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desselben Gebietsansässigen, abweichend von Abs. 1 Ziff. 1 Halbsatz 1 als ein Gebietsfremder,
3.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abweichend von § 4 Abs. 1 Ziff. 3 und 4 nicht als Gebietsansässige oder Gebietsfremde

gelten,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um den in der Ermächtigung bestimmten Zweck zu erreichen.

§ 6

Rechtsgeschäfte für Rechnung Gebietsfremder

Rechtsvorschriften, die aufgrund einer in diesem Gesetz enthaltenen Ermächtigung ergehen, können vorschreiben, daß

1. Beschränkungen für Rechtsgeschäfte Gebietsfremder oder zwischen Gebietsfremden und Gebietsansässigen, die in einer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orschrift angeordnet sind, auch für Rechtsgeschäfte gelten, die zum Gegenstand haben, daß unmittelbar oder mittelbar zwischen einem Gebietsansässigen und einem Dritten

für Rechnung oder im Auftrag eines Gebietsfremden ein Rechtsgeschäft vorgenommen wird, das zwischen Gebietsfremden und Gebietsansässigen oder für Gebietsfremde beschränkt wäre,

2. das Handeln für Rechnung oder im Auftrag eines Gebietsfremden im Sinne der Ziff. 1 dem Dritten durch den Gebietsansässigen oder über eine andere bei dem Zustandekommen des Rechtsgeschäfts mitwirkende Person vor der Vornahme des Rechtsgeschäfts mitzuteilen ist,
3. das dem Dritten gegenüber vorgenommene Rechtsgeschäft den Beschränkungen unterliegt, die gelten würden, wenn es ein Gebietsfremder vorgenommen hätte, sofern der Dritte die Mitteilung nach Ziff. 2 erhalten oder von dem Handeln für Rechnung oder im Auftrag eines Gebietsfremden vor der Vornahme des Rechtsgeschäfts auf andere Weise Kenntnis erlangt hat,
4. im Falle einer nach § 10 angeordneten Depotpflicht ein Gebietsansässiger, der für Rechnung oder im Auftrag eines Gebietsfremden einem anderen Gebietsansässigen unmittelbar oder mittelbar einen Kredit im Sinne des § 10 Abs. 1 gewährt, dafür Sorge zu tragen hat, daß dem anderen Gebietsansässigen die Herkunft der Mittel vor Aufnahme des Kredits mitgeteilt wird,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um den in der Ermächtigung bestimmten Zweck zu erreichen. Unterbleibt eine aufgrund des Satzes 1 Ziff. 4 angeordnete Mitteilung, so werden die Verbindlichkeiten aus dem Kredit für die Depotpflicht dem Gebietsansässigen als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Gebietsfremden zugerechnet.

§ 7

Rechtsgeschäfte für Rechnung Gebietsansässiger

Rechtsvorschriften, die aufgrund einer in diesem Gesetz enthaltenen Ermächtigung ergehen, können ferner vorschreiben, daß Beschränkungen für Rechtsgeschäfte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die in einer aufgrund dieses Gesetzes erlassenen Rechtsvorschrift angeordnet sind, auch für Rechtsgeschäfte gelten, die zum Gegenstand haben, daß unmittelbar oder mittelbar zwischen einem Gebietsfremden und einem Dritten für Rechnung oder im Auftrag eines Gebietsansässigen ein Rechtsgeschäft vorgenommen wird, das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beschränkt wäre,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um den in der Ermächtigung bestimmten Zweck zu erreichen.

Zweiter Abschnitt

Allgemeine Beschränkungsmöglichkeiten

§ 8

Erfüllung zwischenstaatlicher Vereinbarungen

Zur Erfüllung zwischenstaatlicher Vereinbarungen, denen die DDR angehört, können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beschränkt und bestehende Beschränkungen aufgehoben sowie Pflichten für Lieferungen oder Bezüge festgelegt werden. Das gilt auch für die Sicher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rfordernisse aus bestehenden Verrechnungsabkommen.

§ 9

Abwehr schädigender Einwirkungen aus fremden Währungsgebieten

(1)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im Wirtschaftsverkehr mit fremden Währungsgebieten können beschränkt werden, um schädlichen Folgen für die Wirtschaft oder einzelne Wirtschaftszweige im Wirtschaftsgebiet vorzubeugen oder entgegenzuwirken, wenn solche Folgen durch Maßnahmen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drohen oder entstehen, die

1. den Wettbewerb einschränken, verfälschen oder verhindern oder
2. zu Beschränkungen des Wirtschaftsverkehrs mit dem Wirtschaftsgebiet führen.

(2)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können ferner beschränkt werden, um Auswirkungen von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herrschenden, mit den Prinzipien der Ordn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icht übereinstimmenden Verhältnissen auf das Wirtschaftsgebiet vorzubeugen oder entgegenzuwirken.

§ 10

Abwehr schädigender Geld- und Kapitalzuflüsse aus fremden Währungsgebieten

(1) Wird die Wirksamkeit der Währungs- und Konjunkturpolitik durch Geld- und Kapitalzuflüsse aus fremden Währungsgebieten derart beeinträchtigt, daß das gesamtwirtschaftliche Gleichgewicht gefährdet ist, so kann durch Rechtsvorschrift vorgeschrieben werden, daß Gebietsansässige einen bestimmten Vom-Hundert-Satz der Verbindlichkeiten aus den von ihnen unmittelbar oder mittelbar bei einem Gebietsfremden aufgenommenen Darlehen oder sonstigen Krediten während eines bestimmten Zeitraums zinslos auf einem Konto bei der Deutschen Bundesbank in Deutscher Mark zu halten haben (Depotpflicht). Als Kredite im Sinne des Satzes 1 gelten alle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die wirtschaftlich eine Kreditaufnahme darstellen. Geht ein Gebietsansässiger gegenüber einem Gebietsfremden eine Verbindlichkeit durch Ausstellung, Annahme oder Indossierung eines Wechsels ein, so gilt eine im Zusammenhang hiermit von dem Gebietsfremden erbrachte Geldleistung für die Dauer der Laufzeit des Wechsels als Kredit.

(2) Absatz 1 Satz 1 gilt nicht für die Verbindlichkeiten, für die Mindestreserven bei der Deutschen Bundesbank unterhalten werden müssen.

(3) Durch Rechtsvorschriften wird bestimmt, welche Arten von Verbindlichkeiten, die in unmittelbarem Zusammenhang mit der handelsüblichen Abwicklung von Waren- und Dienstleistungsgeschäften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stehen, von der Depotpflicht ausgenommen werden. Weitere Verbindlichkeiten können durch Verordnung von der Depotpflicht ausgenommen werden, soweit hierdurch eine Gefährdung der nach Abs. 1 Satz 1 zu wahrenen Belange nicht zu erwarten ist.

(4) Die Höhe des in Abs. 1 Satz 1 genannten Vom-Hundert-Satzes (Depotsatz) wird jeweils durch Verordnung festgelegt. Der Depotsatz darf hundert nicht überschreiten.

(5) Der Depotpflichtige kann die zur Erfüllung seiner Depotpflicht bei der Deutschen Bundesbank eingezahlten Beträge nicht zurückverlangen und den Rückzahlungsanspruch nicht übertragen, solange seine Depotpflicht besteht.

§ 11

Schutz der Sicherheit und der auswärtigen Interessen

(1)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können beschränkt werden, um

1. die Sicherhe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gewährleisten,
2. eine Störung des friedlichen Zusammenlebens der Völker zu verhüten oder
3. zu verhüten, daß die auswärtigen Bezieh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heblich gestört werden.

(2) Nach Abs. 1 können insbesondere beschränkt werden

1. die Ausfuhr oder Durchfuhr von
 - a) Waffen, Munition und Kriegsgerät,
 - b) Gegenständen, die bei der Entwicklung, Erzeugung oder dem Einsatz von Waffen, Munition und Kriegsgerät nützlich sind, oder
 - c) Konstruktionszeichnungen und sonstigen Fertigungsunterlagen für die in Buchstaben a und b bezeichneten Gegenstände,
- vor allem, wenn die Beschränkung der Durchführung

einer in internationaler Zusammenarbeit vereinbarten Ausfuhrkontrolle dient;

2. die Ausfuhr von Gegenständen, die zur Durchführung militärischer Aktionen bestimmt sind;
3. die Einfuhr von Waffen, Munition und Kriegsgerät;
4. Rechtsgeschäfte über gewerbliche Schutzrechte, Erfindungen, Herstellungsverfahren und Erfahrungen in bezug auf die in Ziff. 1 bezeichneten Waren und sonstigen Gegenstände.

(3) Zu den in Abs. 1 genannten Zwecken können auch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von Bürger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beschränkt werden, die sich auf Waren und sonstige Gegenstände nach Abs. 2 Ziff. 1 einschließlich ihrer Entwicklung und Herstellung beziehen, wenn de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 Inhaber eines Personaldokumen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st oder
2. verpflichtet wäre, einen Personalausweis zu besitzen, falls er eine Wohnung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hätte.

Dies gilt vor allem, wenn die Beschränkung der in internationaler Zusammenarbeit vereinbarten Verhinderung der Verbreitung von Waren und sonstigen Gegenständen nach Abs. 2 Ziff. 1 dient.

Dritter Abschnitt

Warenverkehr

§ 12

Warenausfuhr

(1) Die Ausfuhr von Waren kann beschränkt werden, um einer Gefährdung der Deckung des lebenswichtigen Bedarfs im Wirtschaftsgebiet oder in Teilen des Wirtschaftsgebietes im gesamtwirtschaftlichen Interesse vorzubeugen oder entgegenzuwirken. Die Beschränkungen sind nur zulässig, wenn der Bedarf auf andere Weise nicht, nicht rechtzeitig oder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n Mitteln gedeckt werden kann.

(2) Die Ausfuhr von ernährungs- und landwirtschaftlichen Erzeugnissen kann beschränkt werden, um erheblichen Störungen der Ausfuhr durch Lieferung minderwertiger Erzeugnisse vorzubeugen oder entgegenzuwirken. Dabei können durch Rechtsvorschrift Mindestanforderungen für die Güte der Erzeugnisse vorgeschrieben werden.

(3) Die Ausfuhr von Waren, die in das Wirtschaftsgebiet verbracht worden sind, kann beschränkt werden, um im Rahmen der Zusammenarbeit in einer zwischenstaatlichen wirtschaftlichen Organisation sicherzustellen, daß die Regelung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ie Wareneinfuhr aus Gebieten außerhalb der Organisation wirksam durchgeführt werden können.

§ 13

Ausfuhrverträge

(1) Bei Rechtsgeschäften, durch die sich ein Gebietsansässiger zur Lieferung einer Ware nach fremden Währungsgebieten verpflichtet (Ausfuhrverträge), kann die Vereinbarung von Zahlungs- oder Lieferungsbedingungen, die für den Abnehmer günstiger als die handels- und branchenüblichen Bedingungen sind, beschränkt werden, um erheblichen Störungen der Ausfuhr in das Käuferland vorzubeugen oder entgegenzuwirken.

(2) Im Ausfuhrgeschäft soll der Ausfuhre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ußenwirtschaftlichen Belange der Allgemeinheit die Preise so gestalten, daß schädliche Auswirkungen, insbesondere Abwehrmaßnahmen des Käufer- oder Verbrauchlandes, vermieden werden.

§ 14

Wareneinfuhr

(1) Die Einfuhr von Waren durch Gebietsansässige ist nach Maßgabe der durch Rechtsvorschrift erlassenen Einfuhrliste

ohne Genehmigung zulässig. Im übrigen bedarf die Einfuhr von Waren der Genehmigung.

(2) Die Einfuhrliste kann durch Rechtsvorschrift geändert werden.

(3) Durch Änderung der Einfuhrliste sind Einfuhrbeschränkungen aufzuheben, soweit die nach den §§ 8 bis 11 zu berücksichtigenden Zwecke oder ein berechtigtes Schutzbedürfnis der Wirtschaft oder einzelner Wirtschaftszweige im Wirtschaftsgebiet oder in Teilen des Wirtschaftsgebietes der Aufhebung der Beschränkungen auch unter Berücksichtigung handelspolitischer Erfordernisse nicht mehr entgegenstehen. Das Schutzbedürfnis ist berechtigt, wenn ohne die Beschränkungen Waren in derart erhöhten Mengen und unter solchen Bedingungen eingeführt würden, daß ein erheblicher Schaden für die Erzeugung gleichartiger oder zum gleichen Zweck verwendbarer Waren im Wirtschaftsgebiet eintritt oder eintreten droht, und wenn dieser Schaden im Interesse der Allgemeinheit abgewendet werden muß. Ist die Einfuhr durch andere Rechtsvorschriften beschränkt, so soll im allgemeinen von der Änderung der Einfuhrliste abgesehen werden, auch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gegeben sind.

(4) Durch Änderung der Einfuhrliste dürfen Einfuhrbeschränkungen nur angeordnet werden, soweit dies zur Wahrung der in Abs. 3 genannten Belange geboten ist.

(5) Durch Rechtsvorschrift kann vorgesehen werden, daß die Einfuhr keiner Genehmigung bedarf,

1. wenn die Waren nicht in den freien Verkehr des Wirtschaftsgebietes verbracht werden oder
2. wenn durch Begrenzung der Warenmenge, des Warenwertes, durch Beschränkung des Verwendungszwecks oder auf andere Weise eine Gefährdung der nach Abs. 3 zu wählenden Belange ausgeschlossen wird.

Dies gilt insbesondere für die Einfuhr in einen Freihafen, für die Einfuhr im Zollveredelungsverkehr, zur Zollagerung, im Reiseverkehr, im kleinen Grenzverkehr, für Zwecke des Schiffsbedarfs, zur nichtgewerbsmäßigen Verwendung sowie für die Einfuhr von Übersiedlungs- und Erbschaftsgut.

§ 15

Lieferfristen bei der genehmigungsfreien Einfuhr

Bei der genehmigungsfreien Einfuhr kann die Vereinbarung und Inanspruchnahme von Lieferfristen beschränkt werden, um die in § 14 Abs. 3 genannten Belange zu wahren.

§ 16

Genehmigungsbedürftige Einfuhr

(1) Für Waren, deren Einfuhr der Genehmigung bedarf, sind unter Berücksichtigung der handels- und sonstigen wirtschaftspolitischen Erfordernisse Einfuhrgenehmigungen zu erteilen, soweit dies unter Wahrung der in § 14 Abs. 3 genannten Belange möglich ist.

(2) Bei der Erteilung von Einfuhrgenehmigungen handeln die zuständigen Stellen nach Richtlinien, die der Minister für Wirtschaft und der Minister für Ernährung, Land- und Forstwirtschaft im beiderseitigen Einvernehmen und in Abstimmung mit dem Minister der Finanzen und der Deutschen Bundesbank erlassen. Auf der Grundlage dieser Richtlinien sollen die für die Erteilung von Einfuhrgenehmigungen zuständigen Stellen in einer amtlichen Bekanntmachung des Ministers der Justiz die Einzelheiten bekannt geben, die bei den Anträgen auf Erteilung der Genehmigung zu beachten sind (Ausschreibung).

§ 17

Verwendungsbeschränkungen bei der Wareneinfuhr

Ist die Einfuhr von Waren unter der Voraussetzung zugelassen oder unter der Auflage genehmigt, daß die Ware nur in bestimmter Weise verwendet werden darf, so hat der Veräußerer diese Verwendungsbeschränkung bei der Veräußerung jedem Erwerber der Ware nachweisbar mitzuteilen. Der Einfuhrer und der Erwerber dürfen die Ware nur in der vorgeschriebenen Weise verwenden.

§ 18

Sicherung der Einfuhr lebenswichtiger Waren

Rechtsgeschäfte mit Gebietsfremden über Waren, deren Einfuhr zur Deckung des lebenswichtigen Bedarfs im Wirtschaftsgebiet oder in Teilen des Wirtschaftsgebiets zwischenstaatlich vereinbart worden ist, können beschränkt werden, um die Einfuhr dieser Waren und ihren Verbleib im Wirtschaftsgebiet zu sichern. Zu demselben Zweck können Rechtsgeschäfte über die Bearbeitung und Verarbeitung solcher Waren in fremden Wirtschaftsgebieten beschränkt werden.

Vierter Abschnitt

Dienstleistungsverkehr

§ 19

Aktive Lohnveredlung

Rechtsgeschäfte, durch die sich ein Gebietsansässiger verpflichtet, im Wirtschaftsgebiet Waren eines Gebietsfremden zu bearbeiten oder zu verarbeiten (aktive Lohnveredelung), können beschränkt werden, um einer Gefährdung der Deckung des lebenswichtigen Bedarfs im Wirtschaftsgebiet oder in Teilen des Wirtschaftsgebietes entgegenzuwirken. § 12 Abs. 2 Satz 1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 20

Herstellungs- und Vertriebsrechte

Rechtsgeschäfte über die Vergabe von Herstellungs- und Vertriebsrechten für Erzeugnisse mit geographischer Ursprungsbeziehung in ein fremdes Währungsgebiet können beschränkt werden, wenn die Interessen des Ursprungsgebietes erheblich beeinträchtigt werden. Dies gilt auch für das Einbringen solcher Herstellungs- und Vertriebsrechte in ein Unternehmen in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 21

Audiovisuelle Werke**Rechtsgeschäfte über**

1. den Erwerb von Vorführungs- und Senderechten an audiovisuellen Werken von Gebietsfremden, wenn die Werke zur Vorführung oder Verbreitung im Wirtschaftsgebiet bestimmt sind und
2. die Herstellung von audiovisuellen Werken und Gemeinschaftsproduktion mit Gebietsfremden

können beschränkt werden, um der Filmwirtschaft des Wirtschaftsgebiets ausreichende Auswertungsmöglichkeiten auf dem inneren Markt zu erhalten. Die Beschränkungen sind nur zulässig, wenn ohne sie ein erheblicher Schaden für die Filmwirtschaft des Wirtschaftsgebiets eintritt oder einzutreten droht, und wenn dieser Schaden im Interesse der Allgemeinheit abgewendet werden muß.

§ 22

Seeschifffahrt

Wenn der internationale Seeverkehr durch Maßnahmen beeinträchtigt wird, die eine wettbewerbsmäßige Beteiligung der Flotte der DDR an der Beförderung von Gütern und Passagieren behindern, können der Abschluß von Verträgen zur Beförderung von Gütern und Passagieren durch Seeschiffe fremder Flagge und das Chartern solcher Seeschiffe durch Gebietsansässige beschränkt werden, um erheblichen nachteiligen Auswirkungen auf die wirtschaftliche Lage der Flotte der DDR entgegenzuwirken.

§ 23

Luftfahrt

Wenn der zwischenstaatliche Luftverkehr durch Maßnahmen beeinträchtigt wird, die eine wettbewerbsmäßige Beteiligung der Flugzeuge au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 der Beförderung von Personen und Gütern behindern, können der Abschluß von Verträgen zur Beförderung

von Personen und Gütern durch Flugzeuge, die nicht im Währungsgebiet eingetragen sind, und das Chartern solcher Flugzeuge durch Gebietsansässige beschränkt werden, um erheblichen nachteiligen Auswirkungen auf die wirtschaftliche Lage des Luftverkehr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ntgegenzuwirken.

§ 24

Binnenschifffahrt

Rechtsgeschäfte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die

1. das Mieten von Binnenschiffen, die nicht in einem Binnenschiffsregister im Wirtschaftsgebiet eingetragen sind,
2. die Beförderung von Gütern mit solchen Binnenschiffen oder
3. das Schleppen durch solche Binnenschiffe

im Güterverkehr innerhalb des Wirtschaftsgebiets zum Gegenstand haben, können beschränkt werden, um Störungen der im Interesse der Allgemeinheit zu wahren Ordnung zwischen den Verkehrsträgern zu verhindern.

§ 25

Schadensversicherungen

Rechtsgeschäfte über Schiffskasko-, Schiffshaftpflicht-, Transport- und Luftfahrtversicherungen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Versicherungsunternehmen mit Sitz in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in dem gebietsansässige Unternehmen dieser Versicherungszweige in der Ausübung ihrer Tätigkeit behindert werden, können beschränkt werden, um erheblichen nachteiligen Auswirkungen auf die wirtschaftliche Lage der betroffenen Versicherungszweige entgegenzuwirken.

Fünfter Abschnitt

Kapitalverkehr

§ 26

Kapitalausfuhr

(1) Rechtsgeschäfte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können beschränkt werden, wenn sie

1. den entgeltlichen Erwerb von Grundstücken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und von Rechten an solchen Grundstücken,
2. den entgeltlichen Erwerb ausländischer Wertpapiere durch Gebietsansässige,
3. den entgeltlichen Erwerb von Wechseln, die ein Gebietsfremder ausgestellt oder angenommen hat, durch Gebietsansässige,
4. die Unterhaltung von Guthaben bei Geldinstituten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durch Gebietsansässige oder
5. die Gewährung von Darlehen und sonstigen Krediten sowie die Gewährung von Zahlungsfristen an Gebietsfremde

zum Gegenstand haben.

(2) Des weiteren kann für einen Gebietsansässigen die Tilgung von Auslandsschulden, die aus Rechtsgeschäften vor dem 9. Mai 1945 resultieren, beschränkt werden.

(3) Ferner kann für Inhaber- und Orderschuldverschreibungen, die ein Gebietsfremder ausgestellt hat und in denen die Zahlung einer bestimmten Geldsumme versprochen wird, das öffentliche Anbieten zum Verkauf im Wirtschaftsgebiet beschränkt werden.

(4) Beschränkungen nach Abs. 1 sind zulässig, um das Gleichgewicht der Zahlungsbilanz sicherzustellen. Beschränkungen nach Abs. 2 sind zulässig, wenn sie zur Erfüllung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rforderlich sind. Beschränkungen nach Abs. 3 sind zulässig, wenn sie erforder-

derlich sind, um erheblichen nachteiligen Auswirkungen auf den Kapitalmarkt vorzubeugen oder entgegenzuwirken.

§ 27

Kapital- und Geldanlagen Gebietsfremder

(1) Rechtsgeschäfte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können beschränkt werden, wenn sie

1. den entgeltlichen Erwerb von Grundstücken im Wirtschaftsgebiet und von Rechten an solchen Grundstücken durch Gebietsfremde,
2. den entgeltlichen Erwerb von Schiffen, die im Schiffsregister im Wirtschaftsgebiet eingetragen sind, und von Rechten an solchen Schiffen durch Gebietsfremde,
3. den entgeltlichen Erwerb von Unternehmen mit Sitz im Wirtschaftsgebiet und Beteiligungen an solchen Unternehmen durch Gebietsfremde,
4. den entgeltlichen Erwerb inländischer Wertpapiere durch Gebietsfremde,
5. den entgeltlichen Erwerb von Wechseln, die ein Gebietsansässiger ausgestellt oder angenommen hat, durch Gebietsfremde,
6. die unmittelbare oder mittelbare Aufnahme von Darlehen und sonstigen Krediten durch Gebietsansässige sowie den entgeltlichen Erwerb von Forderungen gegenüber Gebietsansässigen durch Gebietsfremde oder
7. die Führung und Verzinsung von Konten bei Geldinstituten im Wirtschaftsgebiet Gebietsfremder

zum Gegenstand haben. Als Kredite im Sinne des Satzes 1 Ziff. 6 gelten alle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die wirtschaftlich eine Kreditaufnahme darstellen.

(2) Ferner können beschränkt werden

1. die Gründung von Unternehmen mit Sitz im Wirtschaftsgebiet durch Gebietsfremde oder unter Beteiligung von Gebietsfremden an der Gründung oder
2. die Ausstattung von Unternehmen,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im Wirtschaftsgebiet mit Vermögenswerten (Betriebsmittel und Anlagewerte) durch Gebietsfremde.

(3) Beschränkungen nach Absatz 1 und 2 sind zulässig, um einer Beeinträchtigung der Kaufkraft der Deutschen Mark entgegenzuwirken oder das Gleichgewicht der Zahlungsbilanz sicherzustellen.

Sechster Abschnitt

Gold

§ 28

Verkehr mit Gold

(1) Rechtsgeschäfte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über Gold sowie die Ausfuhr und Einfuhr von Gold können beschränkt werden, um einer Beeinträchtigung der Kaufkraft der Deutschen Mark entgegenzuwirken oder das Gleichgewicht der Zahlungsbilanz sicherzustellen.

(2) Beschränkungen des Verkehrs mit Gold nach den §§ 12 bis 17 bleiben unberührt.

Zweiter Teil

Ergänzende Vorschriften

§ 29

Deutsche Bundesbank

Die Beschränkungen, die dieses Gesetz enthält oder die durch Rechtsvorschrift aufgrund dieses Gesetzes vorgeschrieben werden, gelten nicht für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welche die Deutsche Bundesbank im Rahmen ihres Geschäftskreises vornimmt oder welche ihr gegenüber vorgenommen werden.

§ 30

Verfahrens- und Meldevorschriften

(1) Durch Rechtsvorschrift können Bestimmungen über das Verfahren bei der Vornahme von Rechtsgeschäften oder Handl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erlassen werden, soweit solche Bestimmungen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oder zur Überprüfung der Rechtsgeschäfte oder Handlungen auf ihre Rechtmäßigkeit im Sinne dieses Gesetzes erforderlich sind. Durch Rechtsvorschrift können ferner Aufzeichnungs- und Aufbewahrungspflichten vorgeschrieben werden, soweit sie zur Überwachung der Rechtsgeschäfte oder Handlungen auf ihre Rechtmäßigkeit im Sinne dieses Gesetzes oder der Erfüllung von Meldepflichten nach den Absätzen 2 und 3 erforderlich sind und soweit sie nicht bereits nach handels- oder steuerrechtlichen Vorschriften bestehen.

(2) Durch Rechtsvorschrift kann bestimmt werden, daß Rechtsgeschäfte und Handl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insbesondere aus ihnen erwachsende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owie Vermögensanlagen und die Leistung oder Entgegennahme von Zahlungen, unter Angabe des Rechtsgrundes zu melden sind, wenn dies erforderlich ist, um

1. festzustellen, ob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Aufhebung, Erleichterung oder Anordnung von Beschränkungen vorliegen,
2. laufend die Zahlungsbilanz für das Währungsgebiet erstellen zu können,
3. die Wahrnehmung der außenwirtschaftspolitischen Interessen zu gewährleisten,
4. Verpflichtungen aus zwischenstaatlichen Vereinbarungen erfüllen zu können oder
5. die Durchführung und Einhaltung einer aufgrund des § 10 Abs. 1 Satz 1 vorgeschriebenen Depotpflicht zu gewährleisten.

(3) Durch Rechtsvorschrift kann ferner bestimmt werden, daß der Stand und ausgewählte Positionen der Zusammensetzung des Vermögens Ge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und Gebietsfremder im Wirtschaftsgebiet zu melden sind, soweit dies zur Verfolgung der in Abs. 2 Ziff. 1 bis 4 angegebenen Zwecke erforderlich ist. Vermögen im Sinne des Satzes 1 ist auch die mittelbare Beteiligung an einem Unternehmen. Gehört zu dem meldepflichtigen Vermögen eine unmittelbare oder mittelbare Beteiligung an einem Unternehmen, so kann angeordnet werden, daß auch der Stand und ausgewählte Positionen der Zusammensetzung des Vermögens des Unternehmens zu melden sind, an dem die Beteiligung besteht.

(4) Durch Rechtsvorschrift kann die Pflicht der Anmeldung der Ausfuhr und Einfuhr zur statistischen Erfassung bestimmt werden.

(5) Art und Umfang der Meldepflichten sind auf das Maß zu begrenzen, das notwendig ist, um den in den Absätzen 2 und 3 angegebenen jeweils verfolgten Zweck zu erreichen.

§ 31

Besondere Meldepflichten

(1) Durch Rechtsvorschrift kann angeordnet werden, daß dem Amt für Außenwirtschaft die Vornahme von Rechtsgeschäften oder Handlungen zu melden ist, die sich auf Waren und Technologien im kerntechnischen, biologischen oder chemischen Bereich des Teils I der Ausfuhrliste beziehen, soweit dies zur Verfolgung der in den §§ 8 und 11 Abs. 1 angegebenen Zwecke, insbesondere zur Überwachung des Außenwirtschaftsverkehrs, erforderlich ist.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darf die aufgrund einer Rechtsvorschrift nach Satz 1 erhobenen Informationen speichern und zu den in Satz 1 genannten Zwecken mit anderen bei ihm gespeicherten Informationen abgleichen.

(2) Art und Umfang der Meldepflicht sind auf das Maß zu begrenzen, das notwendig ist, um den in Abs. 1 angegebenen Zweck zu erreichen.

(3) Die aufgrund einer Rechtsvorschrift nach Abs. 1 oder nach § 30 Absätze 2 und 3 erhobenen Informationen sind geheimzuhalten. Die aufgrund einer Rechtsvorschrift gemäß Abs. 1 erhobenen Informationen können an den Minister für Wirtschaft und die für die Überwachung des Außenwirtschaftsverkehrs zuständigen Behörden übermittelt werden, soweit es die in Abs. 1 genannten Zwecke erfordern. Für andere als die in Abs. 1 genannten Zwecke dürfen sie nicht verwendet werden. § 43 bleibt unberührt.

§ 32

Erlaß von Rechtsvorschriften

Die in diesem Gesetz vorgesehenen Rechtsvorschriften erläßt der Ministerrat. Rechtsvorschriften, die der Erfüllung zwischenstaatlicher Vereinbarungen (§ 8) oder dem Schutz der Sicherheit und der auswärtigen Interessen (§ 11) dienen, erläßt der Minister für Wirtschaft im Einvernehmen mit dem Minister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als Durchführungsbestimmung zu diesem Gesetz. Rechtsvorschriften, welche die Bereiche des Kapital- und Zahlungsverkehrs oder den Verkehr mit Auslandswerten und Gold betreffen, erläßt der Minister der Finanzen im Einvernehmen mit dem Minister für Wirtschaft und dem Minister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als Durchführungsbestimmung zu diesem Gesetz; dazu ist vorher die Abstimmung mit der Deutschen Bundesbank herbeizuführen.

§ 33

Genehmigungsstellen

(1) Für die Erteilung von Genehmigungen aufgrund dieses Gesetzes und der zu diesem Gesetz erlassenen Rechtsvorschriften ist, soweit in den folgenden Absätze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zuständig.

(2) Ausschließlich zuständig ist die Deutsche Bundesbank im Bereich des Kapital- und Zahlungsverkehrs sowie des Verkehrs mit Auslandswerten und Gold nach den §§ 8 bis 11, § 26 Abs. 1 und 2, §§ 27 und 28 bzw. der Minister der Finanzen nach dem § 26 Abs. 3.

(3) Soweit für die Erteilung von Genehmigungen in bestimmten Bereichen des Außenwirtschaftsverkehrs eine besondere Bearbeitung erforderlich ist, kann durch Rechtsvorschrift, abweichend vom Abs. 1, bestimmt werden, daß

1. der Minister für Ernährung, Land- und Forstwirtschaft im Bereich des Waren- und Dienstleistungsverkehrs bei Erzeugnissen der Ernährungs- und Landwirtschaft nach den §§ 8 und 9, 11 bis 16, 18 und 20,
2. der Minister für Verkehr im Bereich des Dienstleistungsverkehrs auf dem Gebiete des Verkehrswesens nach den §§ 8, 9 und 11 sowie 22 bis 24,
3. der Minister für Umwelt, Naturschutz, Energie und Reaktorsicherheit im kerntechnischen Bereich nach den §§ 8 und 11,
4. der Minister für Medienpolitik für den Bereich des Fernsehens und der Minister für Kultur für den Bereich der Filmwirtschaft nach den §§ 8, 11 und 21

zuständig sind. Durch Rechtsvorschrift können die Zuständigkeiten der in den Ziffern 1 bis 4 genannten Minister auf nachgeordnete Behörden übertragen werden.

§ 34

Heranziehung zur Depotpflicht

(1) Kommt ein nach § 10 der Depotpflicht Unterliegender seiner Verpflichtung aus einer aufgrund des § 10 erlassenen Rechtsvorschrift nicht nach, so wird er von der Deutschen Bundesbank durch Bescheid zur Erfüllung seiner Verpflichtung herangezogen. Für die Vollstreckung des Bescheides finden die Rechtsvorschriften über die Vollstreckung wegen Geldforderungen staatlicher Organe und Einrichtungen entsprechende Anwendung.

(2)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gegen den in Abs. 1 Satz 1 genannten Bescheid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 35

Genehmigungen

(1) Genehmigungen können mit Nebenbestimmungen versehen werden. Die Genehmigungen sind nicht übertragbar, wenn in ihnen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wird.

(2) Die Genehmigung, die Ablehnung eines Antrags auf Erteilung einer Genehmigung, die Rücknahme und der Widerruf einer Genehmigung bedürfen der Schriftform.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 36

Rechtsunwirksamkeit

Ein Rechtsgeschäft, das ohne die erforderliche Genehmigung vorgenommen wird, ist unwirksam. Es wird vom Zeitpunkt der Erteilung der Genehmigung an wirksam.

§ 37

Urteil und Zwangsvollstreckung

(1) Ist zur Leistung des Schuldners eine Genehmigung erforderlich, so kann das Urteil vor Erteilung der Genehmigung ergehen, wenn in die Urteilsformel ein Vorbehalt aufgenommen wird, daß die Leistung oder Zwangsvollstreckung erst erfolgen darf, wenn die Genehmigung erteilt ist. Entsprechendes gilt für andere Vollstreckungstitel, wenn die Vollstreckung nur aufgrund einer vollstreckbaren Ausfertigung des Titels durchgeführt werden kann. Einstweilige Anordnungen, die lediglich der Sicherung des zugrundeliegenden Anspruchs dienen, können ohne Vorbehalt ergehen.

(2) Ist zur Leistung des Schuldners eine Genehmigung erforderlich, so ist die Zwangsvollstreckung nur zulässig, wenn und soweit die Genehmigung erteilt ist. Soweit Vermögenswerte nur mit Genehmigung erworben oder veräußert werden dürfen, gilt dies auch für den Erwerb und die Veräußerung im Wege der Zwangsvollstreckung.

Dritter Teil

Straf-, Ordnungsstraf- und Überwachungsvorschriften

§ 38

Ordnungswidrigkei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einer nach § 11 in Verbindung mit § 2 erlassenen Rechtsvorschrift zuwiderhandelt, soweit sie für einen bestimmten Tatbestand auf diese Ordnungsstrafvorschrift verweist.

(2) Ordnungswidrig handelt auch,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1. ohne die nach § 14 Abs. 1 Satz 2 erforderliche Genehmigung Waren einführt,
2. entgegen § 17 Satz 1 dem Erwerber eine Verwendungsbeschränkung nicht mitteilt und dadurch bewirkt, daß die Ware entgegen der Beschränkung verwendet wird,
3. als Einführer oder Erwerber die Ware entgegen einer Verwendungsbeschränkung verwendet (§ 17 Satz 2) oder
4. einer vollziehbaren Auflage nach § 35 Abs. 1 Satz 1 zuwiderhandelt.

(3) Ordnungswidrig handelt auch,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einer

1. nach den §§ 6, 7, 9, 10, 12 Abs. 3, § 13 Abs. 1, §§ 15, 18 bis 28 oder
2. nach den §§ 8, 12 Abs. 1 oder 2

in Verbindung mit § 2 erlassenen Rechtsvorschrift zuwiderhandelt, soweit sie für einen bestimmten Tatbestand auf diese Ordnungsstrafvorschrift verweist.

(4) Ordnungswidrig handelt ferner, wer

1.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Angaben tatsächlicher Art macht oder benutzt, um für sich oder einen anderen eine

Genehmigung oder eine Bescheinigung zu erschleichen, die nach diesem Gesetz oder einer zu seiner Durchführung erlassenen Rechtsvorschrift erforderlich ist,

2. einer nach den §§ 30 und 31 erlassenen Rechtsvorschrift zuwiderhandelt, soweit sie für einen bestimmten Tatbestand auf diese Ordnungsstrafvorschrift verweist,
3. entgegen § 42 eine Auskunft nicht,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erteilt, geschäftliche Unterlagen nicht vorlegt oder eine Prüfung nicht duldet oder entgegen § 44 Abs. 1 die dort bezeichneten Sachen nicht darlegt, eine Untersuchung oder Prüfung nicht duldet; entgegen § 44 Abs. 2 eine Erklärung nicht abgibt oder entgegen § 44 Abs. 3 eine Sendung nicht gestellt oder
4. die Nachprüfung (§ 42) von Umständen, die nach diesem Gesetz oder einer zu seiner Durchführung erlassenen Rechtsvorschrift erheblich sind, dadurch verhindert oder erschwert, daß er Bücher und Aufzeichnungen, deren Führung oder Aufbewahrung ihm nach handels- oder steuerrechtlichen Vorschriften obliegt, nicht oder nicht ordentlich führt, nicht aufbewahrt oder verheimlicht.

(5) Die Ordnungswidrigkeit kann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2, 3 und 4 Ziff. 1 mit einer Ordnungsstrafe bis zu einer Million Deutsche Mark, in den Fällen des Absatzes 4 Ziff. 2 bis 4 mit einer Ordnungsstrafe bis zu fünfzigtausend Deutsche Mark geahndet werden.

(6) Der Versuch einer Ordnungswidrigkeit kann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2 Ziff. 1 und des Absatzes 3 Ziff. 2 geahndet werden.

(7) Für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ist die Oberfinanzdirektion zuständig, in deren Bereich die Ordnungswidrigkeit begangen wurde oder, wenn die Rechtsverletzung außerhalb des Wirtschaftsgebietes begangen wurde, die Oberfinanzdirektion, in deren Zuständigkeitsbereich der Wohnsitz oder gewöhnliche Aufenthalt bzw. der Sitz oder Ort der Leitung des Rechtsverletzers sich befindet. Die Durchführung von Ordnungsstrafverfahren zur Ahndung der Verl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ie auf der Grundlage — des § 21 erlassen wurden, obliegt dem Ministerium für Medienpolitik,

— der §§ 22–24 erlassen wurden, obliegt dem Ministerium für Verkehr.

(8) Für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und den Ausspruch von Ordnungsstrafmaßnahmen gilt das Gesetz vom 12. Januar 1968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OWG — (GBl. I Nr. 3 S. 101).

§ 39

Straftaten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eine in § 38 Abs. 1 bezeichnete Handlung begeht, die geeignet ist,

1. die äußere Sicherhe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 das friedliche Zusammenleben der Völker oder
3. die Bezieh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anderen Staaten und Völkern erheblich zu gefährden.

(2) Schwere Fälle der in Abs. 1 bezeichneten Handlungen werden mit Freiheitsstrafe nicht unter 2 Jahren bestraft. Ein schwerer Fall liegt insbesondere vor, wenn der Täter

1.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Straftaten verbunden hat, unter Mitwirkung eines anderen Bandenmitglieds handelt oder
2. durch eine in Abs. 1 Ziff. 1 bezeichnete Tat die Gefahr eines schweren Nachteils für die äußere Sicherhe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beiführt.

(3) Der Versuch ist strafbar.

(4) Handelt der Tät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fahrlässig, wird auf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Geldstrafe erkannt.

§ 40

Einziehung

(1) Ist eine Straftat nach § 39 oder eine Ordnungswidrigkeit nach § 38 begangen worden, so können

1. Gegenstände, auf die sich die Straftat oder die Ordnungswidrigkeit bezieht, und
2. Gegenstände, die zu ihrer Begehung oder Vorbereitung gebraucht worden oder bestimmt gewesen sind, eingezogen werden.

(2) Die Bestimmungen des Strafgesetzbuches und des Gesetzes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sind anzuwenden.

§ 41

Befugnisse der Zollbehörden

(1) Die Staatsanwaltschaft und die zuständigen Behörden können bei Straftaten und Ordnungswidrigkeiten nach den §§ 38 und 39 Ermittlungen auch durch die Hauptzollämter oder die Zollfahndungsstellen vornehmen lassen.

(2) Die Hauptzollämter und die Zollfahndungsstellen sowie deren Mitarbeiter haben auch ohne Ersuchen der Staatsanwaltschaft, des Ministeriums der Finanzen oder des Amtes für Außenwirtschaft Straftaten und Ordnungswidrigkeiten der in Abs. 1 bezeichneten Art zu erforschen und zu verfolgen, wenn diese das Verbringen von Sachen betreffen. Dasselbe gilt, soweit Gefahr in Verzug ist. Die Aufgaben der Untersuchungsorgane des Ministeriums des Innern bleiben unberührt.

(3) In diesen Fällen können die Hauptzollämter und Zollfahndungsstellen sowie deren Mitarbeiter Beschlagnahmen, Durchsuchungen, Untersuchungen und sonstige Maßnahmen nach den geltenden Vorschriften der Strafprozeßordnung vornehmen.

§ 42

Allgemeine Auskunftspflicht

(1) Das Ministerium für Wirtschaft, das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 und Forstwirtschaft, das Ministerium der Finanzen, das Ministerium für Verkehr, das 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Energie und Reaktorsicherheit, die Deutsche Bundesbank,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und die Anstalt für landwirtschaftliche Marktordnung können Auskünfte verlangen,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um die Einhaltung dieses Gesetzes und der zu diesem Gesetz erlassenen Rechtsvorschriften zu überwachen. Zu diesem Zweck können sie verlangen, daß ihnen die geschäftlichen Unterlagen vorgelegt werden. Diese Behörden und die Deutsche Bundesbank können zu dem genannten Zweck auch Prüfungen bei den Auskunftspflichtigen vornehmen;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und die Anstalt für landwirtschaftliche Marktordnung können zu den Prüfungen Beauftragte entsenden. Zur Vornahme der Prüfungen können die Mitarbeiter der in Satz 3 genannten Stellen und deren Beauftragte die Geschäftsräume der Auskunftspflichtigen betreten.

(2) Auskunftspflichtig ist, wer unmittelbar oder mittelbar am Außenwirtschaftsverkehr teilnimmt.

(3) Der zur Erteilung einer Auskunft Verpflichtete kann die Auskunft auf solche Fragen verweigern, deren Beantwortung ihn selbst oder einen der in § 26 Abs. 1 Ziff. 1 bis 3 der Strafprozeßordnung bezeichneten Angehörigen der Gefahr strafgerichtlicher Verfolgung oder eines Verfahrens nach dem Gesetz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aussetzen würde.

§ 43

Übermittlung von Informationen

(1)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kann die ihm bei der Erfüllung seiner Aufgaben nach diesem Gesetz bekanntgewor-

denen Informationen und die Meldungen aufgrund einer Rechtsvorschrift nach § 31 an die anderen zur Überwachung des Außenwirtschaftsverkehrs zuständigen Behörden übermitteln, soweit dies zur Verfolgung der in den §§ 8 und 11 Abs. 1 angegebenen Zwecke erforderlich ist. Dies gilt auch für die Übermittlung an andere Behörden, soweit dies zur Erfüllung ihrer gesetzlichen Aufgaben bei der Verfolgung von Straftaten nach diesem Gesetz erforderlich ist. Die Empfänger dürfen die übermittelten Informationen, soweit gesetzlich nichts anderes bestimmt ist, nur zu dem Zwecke verwenden, zu dem sie übermittelt worden sind.

(2) Der Abruf der Daten nach Abs. 1 Satz 1 in einem automatisierten Verfahren durch Organe der Zollfahndung ist zulässig, wenn es im Einzelfall zur Überwachung des Außenwirtschaftsverkehrs erforderlich ist.

§ 44

Überwachung des Fracht-, Post- und Reiseverkehrs

(1) Sachen, die ausgeführt, eingeführt oder durchgeführt werden, sind auf Verlangen darzulegen. Sie können einer Beschau und einer Untersuchung unterworfen werden. Beförderungsmittel, Gepäckstücke und sonstige Behältnisse können darauf geprüft werden, ob sie Sachen enthalten, deren Ausfuhr, Einfuhr oder Durchfuhr beschränkt ist.

(2) Wer nach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ausreist oder aus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einreist, hat auf Verlangen zu erklären, ob er Sachen mit sich führt, deren Verbringen nach diesem Gesetz oder nach den zu diesem Gesetz erlassenen Rechtsvorschriften beschränkt ist.

(3) Wer Sachen nach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ausführen will, hat die Sendung den zuständigen Zollstellen zur Ausfuhrabfertigung zu stellen. Das Nähere wird durch Rechtsvorschrift nach § 30 bestimmt. Zur Erleichterung des Post-, Fracht- und Reiseverkehrs können durch Rechtsvorschrift Ausnahmen zugelassen werden, soweit hierdurch der Überwachungszweck nicht gefährdet wird.

(4) Die Zollbehörden überwachen die Einhaltung der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und der zu diesem Gesetz erlassenen Rechtsvorschriften über die Ausfuhr, Einfuhr und Durchfuhr. Der Minister des Innern bestimmt die Behörden des Grenzschutzes, die für die Überwachung der Ausfuhr von Waffen und Sprengstoff zuständig sind; Satz 1 bleibt unberührt.

§ 45

Kosten

(1) Die Zollbehörden können für die Abfertigung außerhalb des Amtsplatzes oder außerhalb der Öffnungszeiten bei de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oder der zu diesem Gesetz erlassenen Rechtsvorschriften über die Ausfuhr, Einfuhr und Durchfuhr Kosten erheben.

(2) Für die Bemessung der Kosten und das Verfahren bei ihrer Erhebung gelten sinngemäß die Vorschriften über Kosten, die aufgrund des § 178 der Abgabenordnung erhoben werden.

Vierter Teil

Schluß- und Überleitungsbestimmungen

§ 46

Aufhebung von Gesetzen und anderen Vorschriften

(1) Der Artikel 9 Abs. 5 der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aufgehoben.

(2) Es werden aufgehoben

- § 5 Abs. 4 des Gesetzes vom 16. Oktober 1972 über den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Bl. I Nr. 16 S. 253);

- das Gesetz vom 12. Juli 1973 über den Verkehr mit Edelmetallen, Edelsteinen und Perlen sowie Erzeugnissen aus Edelmetallen, Edelsteinen und Perlen — Edelmetallgesetz — (GBl. I Nr. 33 S. 338);
- das Devisengesetz vom 19. Dezember 1973 (GBl. I Nr. 58 S. 574) in der Fassung des Gesetzes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Devisengesetzes vom 28. Juni 1979 (GBl. I Nr. 17 S. 147) und des 5. Strafrechtsänderungsgesetzes vom 14. Dezember 1988 (GBl. I Nr. 29 S. 335);
- die Verordnung vom 9. September 1976 über die Leitung und Durchführung des Außenhandels (GBl. I Nr. 35 S. 421);
- die Verordnung vom 29. Juni 1989 über die volkseigenen Außenhandelsbetriebe — AHB-Verordnung — (GBl. I Nr. 14 S. 183).

§ 47

Gültigkeit von Genehmigungen

(1) Nach den bisher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erteilte Ausfuhr- und Einfuhrgenehmigungen behalten ihre Gültigkeit.

(2) Nach den bisher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erteilte devisenrechtliche Genehmigungen verlieren mit dem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ihre Gültigkeit.

§ 48

Verfolgung von Ordnungswidrigkeiten und Straftaten

(1) Für die Verfolgung und Ahndung von Straftaten gemäß § 17 des Devisengesetzes sowie Ordnungswidrigkeiten auf devisenrechtlichem Gebiet gemäß § 26 der Ersten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Devisengesetz, die vor dem 1. Juli 1990 begangen wurden, finden die zu diesem Zeitpunkt geltenden Straf- und Ordnungsstrafbestimmungen des Devisengesetzes Anwendung.

(2) Eine vor dem 1. Juli 1990 rechtskräftig ausgesprochene Strafe oder Ordnungsstrafe wegen einer Handlung, für die nach dem 30. Juni 1990 keine strafrechtliche oder ordnungs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mehr vorgesehen ist, wird nicht verwirklicht. Eine bereits begonnene Verwirklichung endet spätestens am Tage des Inkrafttretens dieses Gesetzes. Im Strafregister dazu erfolgte Eintragungen sind zu tilgen.

(3) Anhängige, noch nicht rechtskräftig abgeschlossene Verfahren wegen Handlungen im Sinne des Abs. 2 sind spätestens mit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einzustellen. Soweit für derartige Handlungen andere Formen der Verantwortlichkeit vorgesehen sind, sind die dafür zuständigen Behörden zu informieren. Diese entscheiden in eigener Zuständigkeit über weitere Maßnahmen. Davon ausgeschlossen sind solche Maßnahmen der Verantwortlichkeit, die zu einer Strafverschärfung gegenüber den vor dem 1. Juli 1990 geltenden Straf- und Ordnungsstrafbestimmungen des Devisengesetzes führen würden.

(4) In den Fällen der Absätze 2 und 3 ist eine selbständige Einziehung oder Ersatzeinziehung von auf Mark der DDR lautenden Banknoten und Münzen gemäß § 19 Devisengesetz zulässig, wenn diese entgegen den vor dem 1. Juli 1990 geltenden devisenrechtlichen Vorschriften erlangt oder in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geführt wurden. Das gilt ebenso für die selbständige Festsetzung von Gegenwertzahlungen bei Konten- und Bargeldguthaben, die mittelbar oder unmittelbar durch Einzahlung solcher auf Mark der DDR lautenden Banknoten und Münzen begründet wurden.

(5) Darüber hinaus behalten die Straf- und Ordnungsstrafbestimmungen des Devisengesetzes bis 31. Dezember 1990 ihre Gültigkeit für Fälle im Zusammenhang mit der Währungsstellung entsprechend Artikel 5 der Anlage I zum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 solcher Fall liegt vor, wenn festgestellt wird, daß entgegen der abgegebenen Versicherung

eines Antragstellers ein zur Umstellung angemeldetes Guthaben unmittelbar oder mittelbar durch Einzahlung von auf Mark der DDR lautende Banknoten oder Münzen begründet wurde, die entgegen den bis 30. Juni 1990 geltenden devisa-rechtlichen Bestimmungen erworben oder in das Gebiet der DDR eingeführt wurden. Die Bestimmungen des § 38 Abs. 7 sind anzuwenden.

(6) Für die Verfolgung und Ahndung von Straftaten und Ordnungswidrigkeiten nach dem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Edelmetallen, Edelsteinen und Perlen sowie Erzeugnissen aus Edelmetallen, Edelsteinen und Perlen vom 12. Juli 1973 gelten die Absätze 2 und 3 entsprechend.

(7) Für die Verfolgung und Ahndung von Steuerstraftaten (Zollstraftaten) und Steuerordnungswidrigkeiten (Zollordnungswidrigkeit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angen wurden, gelten die Bestimmungen des Einführungsgesetzes zur Abgabenordn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2. Juni 1990 (Sonderdruck Nr. 1428 des Gesetzblattes).

§ 49

Oberfinanzdirektionen

Die in diesem Gesetz festgelegten Befugnisse der Oberfinanzdirektionen nehmen bis zu deren Bildung die Zolldirektionen wahr.

§ 50

Volkseigene Außenhandelsbetriebe

Auf die Rechtsfähigkeit bestehender volkseigener Außenhandelsbetriebe und auf die Durchführung des Abwicklungsverfahrens für derartige Betriebe finden die Vorschriften der Verordnung vom 29. Juni 1989 über die volkseigenen Außenhandelsbetriebe — AHB-Verordnung — weiterhin Anwendung.

§ 51

Inkrafttreten

Dieses Gesetz tritt am 1. Juli 1990 in Kraft.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acht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acht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Zivilgesetzbuches der DDR
(1. Zivilrechtsänderungsgesetz)
vom 28. Juni 1990**

§ 1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Zivilgesetzbuches

Das Zivilgesetz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9. Juni 1975 (GBl. I Nr. 27 S. 465) wird gemäß Anlage geändert und ergänzt.

§ 2

Änderung und Aufhebung anderer Rechtsvorschriften

Mit dem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werden folgende Rechtsvorschriften geändert:

1. Gesetz vom 5. Februar 1976 über das Staatliche Notariat — Notariatsgesetz — (GBl. I Nr. 6 S. 93)
 - in § 21 Abs. 1 wird als Satz 2 eingefügt: „Als Verpflichtung gilt auch der Anspruch aus einer Hypothek.“
2. Verordnung vom 15. Dezember 1977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 Grundstücksverkehrsverordnung — (GBl. I 1978 Nr. 5 S. 73) in der Fassung der Verordnung

vom 14. Dezember 1988 zur Anpassung von Regelungen über Rechtsmittel der Bürger und zur Festlegung der gerichtlichen Zuständigkeit für die Nachprüfung von Verwaltungsentscheidungen (GBl. I Nr. 28 S. 330)

- in § 2 Abs. 1 werden die Buchstaben c, h und m aufgehoben;
- in § 3 wird Abs. 5 aufgehoben; der bisherige Abs. 6 wird Abs. 5.

3. Verordnung vom 6. November 1975 über die staatliche Dokumentation der Grundstücke und Grundstücksrech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Grundstücksdokumentationsordnung — (GBl. I Nr. 43 S. 697)
 - die Präambel, §§ 8 Abs. 1 Satz 3, 11 Abs. 3, 12 Abs. 3 werden aufgehoben.

§ 3

Übergangsbestimmungen

Für Aufbauhypotheken, die vor dem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begründet wurden, sind die Bestimmungen der §§ 456 Abs. 3 und 458 weiterhin anzuwenden.

§ 4

Inkrafttreten

Dieses Gesetz tritt am 1. Juli 1990 in Kraft.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acht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acht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문서 번호 40

대외무역과 자본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

1990 년 6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Ministerra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내용:

이 문서는 대외무역거래법의 시행령이다. 10 장, 78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외무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41 / 600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en
Außenwirtschafts-, Kapital- und Zahlungsverkehr
— Verordnung über die Außenwirtschaft (VAW) —
vom 28. Juni 1990

Aufgrund des § 32 in Verbindung mit § 2 Abs. 1, §§ 9, 10, 11, 14 Abs. 5, §§ 15, 22, 25, 30, 31, 38, 44 Abs. 3 des Gesetzes vom 28. Juni 1990 über den Außenwirtschafts-, Kapital- und Zahlungsverkehr (GBl. I Nr. 39 S. 515) wird verordnet:

Kapitel I
Allgemeine Vorschriften

§ 1

Antrag

(1) Anträge auf Erteilung einer Genehmigung können, wenn im folgenden nichts anderes bestimmt ist, von jedem gestellt werden, der das genehmigungsbedürftige Rechtsgeschäft oder die genehmigungsbedürftige Handlung vornimmt. Antragsberechtigt ist auch derjenige, der einen Anspruch aus dem Rechtsgeschäft herleitet oder einen Anspruch auf Vornahme der Handlung geltend macht.

(2) Genehmigungen können in Form von Allgemeinen Genehmigungen ergehen, die von Amts wegen erteilt werden.

§ 2

Sammelgenehmigungen

Dem Antragsteller kann eine befristete Genehmigung für eine unbestimmte Anzahl gleichartiger Rechtsgeschäfte oder Handlungen (Sammelgenehmigung) erteilt werden, wenn dies wegen der beabsichtigten Wiederholung der Rechtsgeschäfte oder Handlungen zweckmäßig erscheint.

§ 3

Rückgabe von Genehmigungsbescheiden

Ein Genehmigungsbescheid ist der Genehmigungsstelle unverzüglich zurückzugeben, wenn

1. die erteilte Genehmigung ungültig wird, bevor sie ausgenutzt wurde,
2. der Begünstigte die Absicht aufgibt, die Genehmigung auszunutzen, oder
3. der Bescheid, der nach Verlust durch eine Zweitausfertigung ersetzt worden war, wieder aufgefunden wird.

§ 4

Aufbewahrung von Genehmigungsbescheiden

Genehmigungsbescheide sind, soweit sie nicht zurückgegeben werden müssen, für die Dauer von fünf Jahren nach Ablauf der Gültigkeit aufzubewahren.

§ 5

Warenwert, Wertgrenzen

(1) Wert einer Ware ist das dem Empfänger in Rechnung gestellte Entgelt, in Ermangelung eines Empfängers oder eines feststellbaren Entgelts der Statistische Wert im Sinne der Vorschriften über die Statistik des grenzüberschreitenden Warenverkehrs.

(2) Stellt sich ein Rechtsgeschäft oder eine Handlung als Teil eines einheitlichen wirtschaftlichen Gesamtvorgangs dar, so ist bei Anwendung der Wertgrenzen dieser Verordnung der Wert des Gesamtvorganges zugrunde zu legen.

Kapitel II
Warenausfuhr

1. Titel
Beschränkungen

§ 6

Beschränkung nach § 11 Abs. 1 GAW

(1) Die Ausfuhr der in Teil I Abschnitt A, B und C der Ausfuhrliste genannten Waren und von Unterlagen zur Fertigung dieser Waren bedarf der Genehmigung. Das gleiche gilt für Unterlagen über die in Teil I Abschnitte A, B und C der Ausfuhrliste in einzelnen Nummern benannten Technologien, technischen Daten und technischen Verfahren, sofern sie für Gebietsfremde bestimmt sind, die in einem Land ansässig sind, das nicht Mitglied der Organisation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ist. Die Mitglieder dieser Organisation sind in der Länderliste A/B durch Unterstreichung kenntlich gemacht.

(2) Die in Teil I Abschnitt C der Ausfuhrliste genannten Waren dürfen ohne Genehmigung ausgeführt werden, wenn das Bestimmungsland (§ 10 Abs. 4) ein Land der Länderliste A/B ist und wenn nach dem der Ausfuhr zugrunde liegenden Vertrag derartige Waren im Werte von nicht mehr als viertausend Deutsche Mark geliefert werden sollen. Satz 1 gilt nicht für Waren der Nummern 1461, 1517 a und 1710 der Ausfuhrliste sowie für Datenverarbeitungsprogramme (Software).

§ 7

Beschränkung nach § 11 Abs. 1 GAW

(1) Die Ausfuhr der in Teil I Abschnitte D und E der Ausfuhrliste genannten Waren und von Unterlagen zur Fertigung dieser Waren bedarf der Genehmigung, sofern nicht Käufer- und Bestimmungsland Mitglied der Organisation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sind.

(2) Das Genehmigungserfordernis nach Absatz 1 gilt nicht, wenn nach dem der Ausfuhr zugrunde liegenden Vertrag Waren im Werte von nicht mehr als zehntausend Deutsche Mark geliefert werden sollen. Satz 1 gilt nicht für Waren der Nummer 2002 der Ausfuhrliste.

§ 8

Beschränkung nach § 11 Abs. 1 GAW

Es ist verboten, Waren oder Unterlagen zur Fertigung von Waren auszuführen, die im Zusammenhang mit einem Projekt der Luftbetankung von Flugzeugen oder mit der Errichtung oder dem Betrieb einer Anlage zur Herstellung von chemischen Waffen stehen.

§ 9

Beschränkung nach §§ 8 und 12 Abs. 1 GAW

Die Ausfuhr der in Teil II Spalte 3 der Ausfuhrliste mit B gekennzeichneten Waren nach Ländern außerhalb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bedarf der Genehmigung.

2. Titel

Verfahrens- und Meldevorschriften nach den
§§ 30, 31 und 44 Abs. 3 GAW

§ 10

Begriffsbestimmungen

(1) Ausführer ist, wer Waren nach fremden Währungsgebieten verbringt oder verbringen läßt. Liegt der Ausfuhr ein Ausfuhrvertrag mit einem Gebietsfremden zugrunde, so ist nur der gebietsansässige Vertragspartner Ausführer. Wer lediglich als Spediteur oder Frachtführer oder in einer ähnlichen Stellung bei dem Verbringen von Waren tätig wird, ist nicht Ausführer.

(2) Ausfuhrsendung ist die Warenmenge, die ein Ausführer gleichzeitig über dieselbe Ausgangszollstelle für dasselbe Käuferland nach demselben Bestimmungsland ausführt.

(3) Käuferland ist das Land, in dem der Gebietsfremde ansässig ist, der von dem Gebietsansässigen die Waren erwirbt. Im übrigen gilt als Käuferland das Bestimmungsland.

(4) Bestimmungsland ist das Land, in dem die Waren gebraucht oder verbraucht, bearbeitet oder verarbeitet werden sollen; ist dieses Land nicht bekannt, so gilt als Bestimmungsland das letzte bekannte Land, in das die Waren verbracht werden sollen.

1. Untertitel

Genehmigungsfreie Ausfuhr

§ 11

Gestellung und Anmeldung

(1) Der Ausführer hat zur Ausfuhrabfertigung (zollamtliche Behandlung der Ausfuhrsendung), zur Durchführung der Ausfuhrüberwachung und zur statistischen Anmeldung

1. der Versandzollstelle jede Ausfuhrsendung unter Vorlage einer Ausfuhrerklärung (Anlage A 1), soweit erforderlich mit Ergänzungsblättern (Anlage A ErgBl.), zu stellen und
2. der Ausgangszollstelle die Ausfuhrerklärung abzugeben und ihr die Ausfuhrsendung auf Verlangen zu stellen.

Die Ausfuhrerklärung ist mit einer vo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zugeteilten Nummer zu versehen.

(2) Der Ausführer kann die Ausfuhrsendung bei der Versandzollstelle mit einem Vordruck nach Anlage A 6 unter Vorlage der Ausfuhrerklärung anmelden, anstatt sie bei ihr zu stellen. Die Anmeldung ist nur zulässig, wenn die Waren im Zuständigkeitsbereich der nach § 12 zuständigen Versandzollstelle verpackt oder verladen werden. Sie muß so rechtzeitig erfolgen, daß die zollamtliche Behandlung der Ausfuhrsendung möglich ist.

(3) Die zollamtliche Behandlung durch die Versandzollstelle ist bei Ausfuhrsendungen im Werte bis zu viertausend Deutsche Mark nicht erforderlich.

(4) Die zollamtliche Behandlung durch die Ausgangszollstelle ist bei Versand durch die Post nicht erforderlich.

§ 12

Zuständige Zollstellen

(1) Versandzollstelle ist das Hauptzollamt, in dessen Zuständigkeitsbereich der Ausführer seinen Wohnsitz oder Sitz, eine Zweigniederlassung oder Betriebsstätte hat, oder die von dem Hauptzollamt bestimmte Dienststelle. Die Oberfinanzdirektion kann abweichend von Satz 1 für einzelne Ausführer allgemein oder für bestimmte Ausfuhrsendungen eine andere Versandzollstelle bestimmen. Das für den Ort des Verpackens oder Verladens der Waren zuständige Hauptzollamt oder die von ihm bestimmte Dienststelle kann zulassen, daß die Ausfuhrsendung bei ihm oder ihr gestellt oder angemeldet wird, wenn die Waren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nach Satz 1 zuständigen Hauptzollamts oder im Geschäftsbereich der von diesem bestimmten Dienststelle nur unter besonderen Schwierigkeiten verpackt oder verladen werden können. Sind auf Grund von Beschränkungen, die in Rechtsvorschriften außerhalb dieser Verordnung enthalten sind, die Waren einer anderen Zollstelle vorzuführen oder zu stellen, so kann der Ausführer die Pflicht nach § 11 Abs. 1 Ziff. 1 auch bei dieser Zollstelle erfüllen.

(2) Ist der Ausführer Gebietsfremder, so ist Versandzollstelle jedes Hauptzollamt, in dessen Zuständigkeitsbereich sich die Waren befinden, oder die von dem Hauptzollamt bestimmte Dienststelle.

(3) Ausgangszollstelle ist die nach den Zollvorschriften für die Gestellung bei der Ausfuhr zuständige Zollstelle.

(4) Für Ausfuhr im Versandverfahren zwischen d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und der DDR gilt entspre-

chend der Verordnung über das Versandverfahren als Ausgangszollstelle

1. für Waren, die im Eisenbahnverkehr mit einem deutschen Beförderungspapier nach einem Ausgangsbahnhof im Wirtschaftsgebiet oder nach einem Bahnhof in einem Seehafen oder Zollfreigebiet befördert werden, die den Ausgang überwachende Zollstelle, beim Ausgang über ein Zollfreigebiet nach See die Zollstelle des Zollfreigebietes;
2. in den übrigen Fällen die Zollstelle, bei der das Versandverfahren beginnt (Abgangszollstelle). Ist jedoch das Beförderungspapier bei der Ausfuhr im Versandverfahren per Eisenbahn der Abgangszollstelle nicht vorzulegen, ist Ausgangszollstelle die für den Versandbahnhof zuständige Zollstelle.

(5) Für Ausfuhr nach der TIR-Konvention 1975 (Sonderdruck Nr. 1003 des Gesetzblattes) ist Ausgangszollstelle die Zollstelle, bei der die Warenbeförderung im TIR-Verfahren beginnt (Abgangszollstelle). Die Befugnisse der in Abs. 3 genannten Zollstellen zur Prüfung der Zulässigkeit der Ausfuhr (§ 13 Abs. 1) bleiben unberührt.

§ 13

Verfahren bei der zollamtlichen Behandlung

(1) Die Zollstelle prüft die Zulässigkeit der Ausfuhr. Sie kann zu diesem Zweck von dem Ausführer weitere Angaben und Beweismittel verlangen. Für die zollamtliche Behandlung gelten im übrigen die Zollvorschriften über die Erfassung des Warenverkehrs und die Zollbehandlung sinngemäß.

(2) Die Ausgangszollstelle lehnt die zollamtliche Behandlung ab, wenn die Versandzollstelle nicht die erforderliche zollamtliche Behandlung vorgenommen hat oder wenn die nach § 17 Abs. 4 oder § 18 Abs. 1 Satz 3 erforderliche Versicherung fehlt.

(3) Bei Versand durch die Post ist die Ausfuhrerklärung der Einlieferungspostanstalt abzugeben. Die Postanstalt verweigert die Annahme, wenn die Versandzollstelle nicht die erforderliche zollamtliche Behandlung vorgenommen hat, wenn Nämlichkeitsmittel verletzt sind oder wenn die nach § 17 Abs. 4 erforderliche Versicherung fehlt.

(4) Der Ausführer darf eine Ausfuhrsendung, deren Anmeldung die Versandzollstelle bescheinigt hat, von dem in der Anmeldung angegebenen Ort erst nach Ablauf der angegebenen Zeit, nach Zollschau oder mit Zustimmung der Zollstelle entfernen.

§ 14

Versand-Ausfuhrerklärung

(1) Ein gebietsansässiger Ausführer kann statt der Ausfuhrerklärung eine Versand-Ausfuhrerklärung (Anlage A 3), die mit einer vo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zugeteilten Nummer versehen ist, soweit erforderlich mit Ergänzungsblättern (Anlage A ErgBl.) verwenden.

(2) Im Falle des Absatzes 1 hat der Ausführer innerhalb von zehn Tagen nach Aufgabe der Ware zum Versand bei der nach § 12 Abs. 1 Satz 1 zuständigen Versandzollstelle eine Ausfuhrerklärung abzugeben. Er kann die Angaben mehrerer Versand-Ausfuhrerklärungen in einer Ausfuhrerklärung zusammenfassen, wenn die Waren in einer Ausfuhrsendung ausgeführt worden sind.

(3) Das Hauptzollamt kann einzelnen Ausführern für im Laufe eines Kalendermonats ausgeführte Waren, die nach demselben Bestimmungsland und für dasselbe Käuferland über dieselbe Ausgangszollstelle mit gleichartigem Beförderungsmittel ausgeführt worden sind, die Abgabe einer Ausfuhrerklärung gestatten. Die Ausfuhrerklärung hat alle Ausfuhr zu umfassen, für welche die Versand-Ausfuhrerklärung bis zum Monatsende an die Versandzollstelle zurückgelangt sind. Sie hat außerdem die Ausfuhr des Vormonats zu umfassen, für welche die Versand-Ausfuhrerklärung nicht an die Versandzollstelle zurückgelangt sind. Die Ausfuhrerklärung ist am dritten Werktag des folgenden Monats abzugeben, wenn die Versandzollstelle nichts anderes bestimmt.

§ 15

Versender

(1) Wer auf Veranlassung eines Ausführers, dem er zur Lieferung verpflichtet ist, die Ware zur Erfüllung eines Liefervertrages des Ausführers an dessen gebietsfremden Abnehmer liefert (Versender), kann an Stelle des Ausführers die zollamtliche Behandlung vornehmen lassen; er hat dabei eine Versand-Ausfuhrerklärung zur verwenden. Die §§ 11 bis 13 gelten für den Versender sinngemäß.

(2) Der Versender hat dem Ausführer den Versand der Waren und die Nummer der Versand-Ausfuhrerklärung unverzüglich mitzuteilen. Die Pflichten des Ausführers nach § 14 Abs. 2 und 3 bleiben unberührt.

(3) Veranlaßt der Versender einen Dritten, die Ware an den gebietsfremden Abnehmer des Ausführers zu liefern, so kann auch der Dritte die zollamtliche Behandlung mit Versand-Ausfuhrerklärung vornehmen lassen. Die für den Versender geltenden Vorschriften finden auf den Dritten sinngemäß mit der Maßgabe Anwendung, daß

1. in der Versand-Ausfuhrerklärung an Stelle des Ausführers der Versender anzugeben ist und
2. der Versand der Ware und die Nummer der Versand-Ausfuhrerklärung dem Versender mitzuteilen sind.

Der Versender hat unverzüglich seiner Versandzollstelle eine weitere Versand-Ausfuhrerklärung abzugeben, in welche die Angaben aus der Versand-Ausfuhrerklärung des Dritten sowie Name, Anschrift und Versandzollstelle des Ausführers aufzunehmen sind, und dem Ausführer den Versand der Ware sowie die Nummer der weiteren Versand-Ausfuhrerklärung mitzuteilen. Die Pflichten des Ausführers nach § 14 Abs. 2 und 3 bleiben unberührt.

(4) Sind die Waren nach Absatz 1 oder 3 zollamtlich behandelt worden, so entfällt die Pflicht des Ausführers nach § 11.

§ 16

Zulieferer

(1) Wer auf Grund eines Vertrages mit einem Gebietsfremden Waren an einen Ausführer liefert, der sie nach Be- oder Verarbeitung oder zusammen mit anderen Waren auf Grund eines selbständigen Vertrages mit einem Gebietsfremden ausführt (Zulieferer), hat die Waren, die er an den Ausführer liefert, der Versandzollstelle zu stellen oder bei ihr anzumelden. Er hat eine Versand-Ausfuhrerklärung vorzulegen und diese nach der zollamtlichen Behandlung dem Ausführer zu übersenden.

(2) Der Ausführer hat in der Ausfuhrerklärung an Stelle des Wertes der Ausfuhrsendung den Wert seiner eigenen Leistung anzugeben; er hat auf die Zulieferung hinzuweisen und dabei die zugelieferte Ware, die Nummer der Versand-Ausfuhrerklärung des Zulieferers sowie dessen Namen und Anschrift anzugeben. Er hat die ihm nach Absatz 1 übersandte Versand-Ausfuhrerklärung bei der Versandzollstelle vorzulegen und bei der Ausgangszollstelle abzugeben. In die Versand-Ausfuhrerklärung ist die Nummer der Ausfuhrerklärung einzutragen.

(3) Der Ausführer hat dem Zulieferer den Versand der Waren unverzüglich mitzuteilen. Der Zulieferer hat innerhalb von zehn Tagen nach Versand der Ware eine Ausfuhrerklärung bei der Versandzollstelle abzugeben. Im übrigen gilt § 14 Abs. 2 und 3 für den Zulieferer sinngemäß.

(4) § 11 Abs. 3 findet keine Anwendung.

§ 17

Vorausmeldung

(1) Das Hauptzollamt kann auf Antrag die Vorausmeldung von Waren bei der Versandzollstelle zulassen. In dem Antrag sind die auszuführenden Waren zu bezeichnen; die Nummer des Warenverzeichnisses für die Außenhandelsstatistik ist anzugeben. Soll ständig eine Vielzahl verschiedener Waren ausgeführt werden, so können diese in Warengruppen mit einer Sammelbezeichnung und mit der zutreffenden Positions- oder Kapitelnummer des Warenverzeichnisses angegeben werden.

(2) Sollen Waren unter Vorausmeldung ausgeführt werden, so braucht die Ausfuhrerklärung oder die Versand-Ausfuhrerklärung der Versandzollstelle nicht vorgelegt zu werden. Der Ausführer oder Versender hat der Versandzollstelle spätestens am letzten Arbeitstag vor Beginn eines Kalendervierteljahres anzuzeigen, wenn er in diesem Zeitraum Waren auf Grund einer Zulassung nach Absatz 1 Satz 1 versenden will. Ergibt sich diese Absicht erst im Laufe dieses Zeitraumes, so hat er dies spätestens am letzten Arbeitstag vor dem ersten Verpacken oder Verladen anzuzeigen.

(3) Ort und Zeit des Verpackens oder Verladens der Waren sind der Versandzollstelle im voraus mitzuteilen; sie dürfen nur nach rechtzeitiger Benachrichtigung der Versandstelle geändert werden.

(4) Der Ausführer oder Versender hat in der Ausfuhrerklärung oder in den Fällen der §§ 14 und 15 in der Versand-Ausfuhrerklärung zu versichern, daß er zur Vorausmeldung zugelassen ist.

(5) Die Absätze 1 bis 4 gelten für die Anmeldung von Waren bei der Versandzollstelle durch einen Zulieferer nach § 16 Abs. 1 sinngemäß.

§ 18

Vereinfachtes Verfahren

(1) Die Oberfinanzdirektion kann, wenn die Überwachung der Ausfuhr nicht beeinträchtigt wird, einzelne Ausführer oder Versender von der Pflicht nach § 11 Abs. 1 Ziff. 1 befreien, sofern die Gestellung oder Anmeldung der Waren bei der Versandzollstelle nur unter besonderen Schwierigkeiten möglich ist. In diesen Fällen bedarf es auch keiner Anmeldung der Waren. Der Ausführer oder Versender hat in der Ausfuhrerklärung oder in den Fällen der §§ 14 und 15 in der Versand-Ausfuhrerklärung zu versichern, daß er von der Gestellung und Anmeldung auf Grund einer Zulassung nach Satz 1 befreit ist. Bei Versand durch die Post werden Befreiungen nicht erteilt.

(2) Die Oberfinanzdirektion kann, wenn die Überwachung der Ausfuhr nicht beeinträchtigt wird, einzelnen Ausführern für die Ausfuhr von Massengütern gestatten, daß die Ausfuhrerklärung erst innerhalb einer von ihr zu bestimmenden Frist nach der Ausfuhr abzugeben ist.

(3) Die Oberfinanzdirektion kann, wenn die Überwachung der Ausfuhr nicht beeinträchtigt wird, einzelnen Ausführern gestatten, die zollamtliche Behandlung der Ausfuhrsendung abweichend von den §§ 11 und 12 Abs. 1 bei der für den Versender (§ 15 Abs. 1) zuständigen Versandzollstelle vornehmen zu lassen, sofern die Ausfuhrerklärung vom Versender als Vertreter des Ausführers ausgestellt ist.

2. Untertitel

Genehmigungsbedürftige Ausfuhr

§ 19

Ausfuhrgenehmigung

(1) Die Ausfuhrgenehmigung ist auf einem Vordruck A 5 zu beantragen und zu erteilen. Antragsberechtigt ist nur der Ausführer.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kann abweichend von Satz 1

1. durch Bekanntmachung im amtlichen Bekanntmachungsblatt vorschreiben, daß die Ausfuhrgenehmigung für Waren und Unterlagen, die im Teil I der Ausfuhrliste genannt sind,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A 5 a beantragt wird, der mit einer vom Amt für Außenwirtschaft zugeteilten Nummer versehen sein muß; die Bekanntmachung regelt Einzelheiten über die Herstellung der Vordrucke, um deren maschinelle Lesbarkeit zu gewährleisten;
2. die Ausfuhrgenehmigung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A 5 b erteilen.

(2) Dem Antrag auf Genehmigung der Ausfuhr von Waren, die in Teil I Abschnitt A, B und C der Ausfuhrliste genannt sind, sind beizufügen

1. eine Internationale Einfuhrbescheinigung ("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des Käuferlandes, wenn dieses in der Länderliste D genannt ist, oder

2. eine Internationale Einfuhrbescheinigung („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des Bestimmungslandes, wenn nicht das Käuferland, aber das Bestimmungsland in der Länderliste D genannt ist, oder
3. andere Unterlagen zum Nachweis des Verbleibs der Waren in dem im Antrag angegebenen Verbrauchsland, wenn weder das Käufer- noch das Bestimmungsland in der Länderliste D genannt ist.

(3) Dem Antrag auf Genehmigung der Ausfuhr von Waren, die in Teil I Abschnitt D und E der Ausfuhrliste genannt sind, sind Unterlagen zum Nachweis des Verbleibs der Waren in dem im Antrag angegebenen Bestimmungsland beizufügen.

(4) Die für die Erteilung der Ausfuhrgenehmigung zuständige Stelle kann von dem Erfordernis befreien, die in den Absätzen 2 und 3 bezeichneten Unterlagen beizufügen, sofern hierdurch die in § 11 Abs. 1 des GAW genannten Belange nicht gefährdet werden, insbesondere di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bei der Durchführung einer gemeinsamen Ausfuhrkontrolle nicht beeinträchtigt wird.

§ 20

Besondere Verfahrensvorschriften

(1) Für die genehmigungsbedürftige Ausfuhr von Waren gelten § 11 Abs. 1, 2 und 4, §§ 12 bis 16 und 18 Abs. 1, soweit nicht nachstehend etwas anderes bestimmt ist. Liegt für die Ausfuhr eine Allgemeine Genehmigung oder eine Sammelgenehmigung vor und ist eine zollamtliche Abschreibung nicht erforderlich, so gilt zusätzlich § 17.

(2) Die Ausfuhrgenehmigung ist der Versandzollstelle des Ausführers mit der Ausfuhrerklärung vorzulegen; eine Durchschrift der Ausfuhrgenehmigung ist abzugeben.

(3) Ist eine Befreiung nach § 18 Abs. 1 erteilt, so dürfen die Waren nur mit Versand-Ausfuhrerklärung ausgeführt werden.

3. Titel

Sonderregelungen

§ 21

Befreiungen

(1) Die §§ 6, 9, 11, 12 Abs. 1 und 2, §§ 13 bis 20 gelten nicht für die Ausfuhr von Waren in folgenden Fällen:

1. a) War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bis zu einem Wert von eintausend Deutsche Mark je Ausfuhrsendung,
b) Waren de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is zu einem Wert von zweihundert Deutsche Mark je Ausfuhrsendung;
2. Drucksachen im Sinne der postalischen Vorschriften;
3. Akten, Geschäftspapiere, Urkunden, Korrekturbogen, andere Schriftstücke sowie Manuskripte, die nicht als Handelsware ausgeführt werden;
4. Tonträger und Datenträger, insbesondere Tonbänder, Magnetbänder, Platten, Lochkarten und Lochstreifen, wenn sie nur Mitteilungen oder Daten enthalten, Fernsehbandaufzeichnungen sowie bespielte Tonträger und belichtete Filme, auch entwickelt, für Rundfunk- und Fernsehanstalten, es sei denn, daß die bezeichneten Gegenstände als Handelsware ausgeführt werden;
5. Umkehrfilme, die nach Entwicklung im Wirtschaftsgebiet wieder ausgeführt werden;
6. Entwürfe, technische Zeichnungen, Planpausen, Beschreibungen und ähnliche Unterlagen, die nicht als Handelsware ausgeführt werden;
7. Geschenke bis zu einem Wert von eintausend Deutsche Mark je Ausfuhrsendung;
8. Waren zum Verbrauch oder Gebrauch auf DDR-Lotsenschiffen oder Feuerschiffen außerhalb des Wirtschaftsgebietes sowie auf Anlagen oder Vorrichtungen, die im Bereich des Festlandsockels der DDR zur Aufsuchung und Gewinnung von Bodenschätzen errichtet sind;
9. Beförderungsmittel nebst Zubehör und Lademittel, es sei denn, daß sie Handelsware sind;

10. nichtmilitärische Beförderungsmittel und Teile davon, die zu ihrer Wartung oder Ausbesserung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oder nach ihrer Wartung oder Ausbesserung im Wirtschaftsgebiet ausgeführt werden;
11. gebrauchte Kleidungsstücke, die nicht zum Handel bestimmt sind;
12. Teile von Eisenbahnfahrzeugen, Behältern und Lademitteln, die zurückgeliefert werden, sowie Ersatzstücke für beschädigte Teile nach zwischenstaatlichen Vereinbarungen;
13. Waren, die auf Beförderungsmitteln mitgeführt werden und zu deren Ausrüstung, Betrieb, Unterhaltung oder Ausbesserung, zur Behandlung der Ladung, zum Gebrauch oder Verbrauch während der Reise oder zum Verkauf an Reisende bestimmt sind;
14. Gegenstände, die gebietsansässige Luftfahrtunternehmen zur Ausbesserung ihrer Luftfahrzeuge ausführen;
15. Teile zur Ausbesserung von im Wirtschaftsgebiet zugelassenen Kraftfahrzeugen, die während der vorübergehenden Verwendung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reparaturbedürftig geworden sind;
16. Baubedarf, Betriebsmittel und andere Dienstgegenstände für Anschlußstrecken und für vorgeschobene Eisenbahndienststellen, Zollstellen und Postanstalten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17. Gegenstände im zwischenstaatlichen Amts- und Rechtshilfeverkehr;
18. Gegenstände, die Behörden und Dienststellen der DDR zur Erledigung dienstlicher Aufgaben, zur eigenen dienstlichen Verwendung, zur Lagerung oder Ausbesserung ausführen;
19. Gegenstände zur Erledigung dienstlicher Aufgaben im Rahmen des Abkommens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Internationalen Atomenergie-Organisation über die Anwendung von Sicherheitskontrollen im Zusammenhang mit dem Vertrag über die Nichtverbreitung von Kernwaffen vom 7. März 1972 (GBl. II Nr. 17 S. 181);
20. Geschenke, die Staatsoberhäupter, Regierungs- und Parlamentsmitglieder im Rahmen zwischenstaatlicher Beziehungen von amtlichen Stellen erhalten;
21. Orden, Ehrengaben, Ehrenpreise, Gedenkmünzen und Erinnerungszeichen, die nicht zum Handel bestimmt sind;
22. Waren, welche die im Wirtschaftsgebiet stationierten ausländischen Truppen, die ihnen gleichgestellten Organisationen, das zivile Gefolge sowie deren Mitglieder und Angehörige der Mitglieder im Besitz haben;
23. Diplomaten- und Konsulargut;
24. Gegenstände nach dienstlicher Verwendung durch ausländische oder internationale Behörden;
25. Gebrauchte Waren, die zum Zwecke der Wartung oder Ausbesserung in das Wirtschaftsgebiet eingeführt worden sind und ohne Änderung der ursprünglichen Leistungsmerkmale wieder in das Versendungsland ausgeführt werden; dies gilt nicht für Waren der Ausfuhrliste Teil I;
26. Ersatzlieferungen für ausgeführte Waren, die in das Wirtschaftsgebiet zurückgesandt worden sind oder zurückgesandt werden sollen oder unter zollamtlicher Überwachung vernichtet worden sind, und handelsübliche Nachlieferungen zu bereits ausgeführten Waren;
27. Ballast, der nicht als Handelsware ausgeführt wird;
28. Hausmüll;
29. Waren, die vom gebietsansässigen Empfänger nicht angenommen werden oder die unbestellbar sind, wenn sie im Gewahrsam der Zollbehörde verblieben sind; Waren, die irrtümlich in das Wirtschaftsgebiet verbracht worden und im Gewahrsam des Beförderungsunternehmens verblieben sind;
30. Erbschaftsgut, Heiratsgut, Übersiedlungsgut sowie Hausrat zur Einrichtung einer Zweitwohnung;
31. Gegenstände zum Ausbau, zum Erhalten oder Ausschmücken von Gräbern und Totengedenkstätten, wenn sie nicht als Handelsware ausgeführt werden;
32. Brieftauben, die nicht als Handelsware ausgeführt werden;
33. Briefmarken und Ganzsachen zu Tauschzwecken sowie die dazu gehörenden Alben;

34. Werbegegenstände, die sich durch ihre Aufmachung, Beschaffenheit oder Menge von Waren des üblichen Warenverkehrs unterscheiden; Werbendrucke, Gebrauchsanweisungen, Preisverzeichnisse, Fahrpläne und Vordrucke, es sei denn, daß sie Handelsware sind;
35. Kabel, die zur Herstellung oder Ausbesserung von Seekabelverbindungen ausgeführt werden, soweit die Arbeiten für Rechnung eines Gebietsansässigen vorgenommen werden;
36. Umschließungen und Verpackungsmittel, Behälter (Container) und sonstige Großraumbehältnisse, die wie diese verwendet werden, Paletten, Druckbehälter für verdichtete oder flüssige Gase, Kabeltrommeln und Kettbäume, soweit diese nicht Gegenstand eines Handelsgeschäftes sind, sowie zum Frischhalten beigepacktes Eis;
37. Waren, die zur Ersten Hilfe in Katastrophenfällen oder als Spenden in Notlagen ausgeführt werden;
38. Waren, die von Reisenden zum eigenen Gebrauch oder Verbrauch oder üblicherweise zur Ausübung ihres Berufes mitgeführt oder ihnen zu diesen Zwecken vorausgesandt oder nachgesandt werden; Waren bis zu einem Wert von dreitausend Deutsche Mark, die gebietsansässige Reisende als Geschenke mitführen; nicht zum Handel bestimmte Waren, die gebietsfremde Reisende im Wirtschaftsgebiet erworben haben und bei der Ausreise mitführen;
39. Schußwaffen im Sinne der Schußwaffenverordnung vom 26. März 1987 (GBl. I Nr. 11 S. 131) und die dazugehörige Munition, die
- von gebietsansässigen Reisenden zum eigenen Gebrauch (Jagd, Sport, Eigen- oder Fremdschutz) mitgeführt werden, wenn der Ausführer eine nach der Schußwaffenverordnung gültige Erlaubnis mit sich führt und erklärt, daß die Waffen innerhalb von drei Monaten wieder eingeführt werden sollen, oder
 - von gebietsfremden Reisenden bei der Einreise mit einer gültigen Erlaubnis zum eigenen Gebrauch mitgeführt worden sind und von ihnen wieder ausgeführt werden;
40. im Verkehr zwischen Personen, die in benachbarten, durch zwischenstaatliche Abkommen festgelegten Zollgrenzzonen oder in benachbarten Zollgrenzbezirken ansässig sind (kleiner Grenzverkehr),
- von diesen Personen mitgeführte Ware, die nicht zum Handel bestimmt sind und deren Wert eintausend Deutsche Mark täglich nicht übersteigt,
 - Waren, die diesen Personen als Teil des Lohnes für innerhalb des Wirtschaftsgebietes geleistete Arbeit gewährt werden;
41. Tiere, Saatgut, Düngemittel, Fahrzeuge, Maschinen und sonstige Waren, deren Ausfuhr durch die örtlichen und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in Zollgrenzzonen oder Zollgrenzbezirken bedingt ist und die nach zwischenstaatlichen Verträgen von Ausfuhrbeschränkungen befreit sind;
42. Erzeugnisse des Ackerbaus, der Viehzucht, des Gartenbaus und der Forstwirtschaft solcher grenzdurchschnittener Betriebe, die von fremden Wirtschaftsgebieten aus bewirtschaftet werden;
43. Futter- und Streumittel, die zur Fütterung und Wartung von mitgeführten Tieren dienen, wenn sie nach Art und Menge dem üblichen und mutmaßlichen Bedarf für die Dauer der Beförderung entsprechen;
44. elektrischer Strom, Wasser, Stadtgas, Ferngas und ähnliche Gase in Leitungen;
45. Deputatkohle;
46. Baubedarf, Instandsetzungs- und Betriebsmittel für Stauwerke, Kraftwerke, Brücken, Straßen und sonstige Bauten, die beiderseits der Grenze errichtet, betrieben oder benutzt werden;
47. Waren, die zur vorübergehenden Lagerung oder lediglich zur Beförderung außerhalb des Wirtschaftsgebietes ausgeführt werden und unverändert wieder eingeführt werden sollen;
48. Waren, die in das Wirtschaftsgebiet eingeführt worden sind und unverändert in das Versandungsland wieder ausgeführt werden, wenn sie noch nicht oder zur vorübergehenden Zollgutverwendung einfuhrrechtlich abgefertigt worden sind;
49. Waren, die unter den sonstigen in Ziff. 48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in ein anderes als das Versandungsland wieder ausgeführt werden;
50. Waren für die Ausübung dienstlicher Tätigkeiten, die
- nach den Vorschriften, die beim Beitritt zu zwischenstaatlichen Verträgen erlassen wurden,
 - nach der Bekanntmachung vom 28. August 1975 über den Beitri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m Abkommen über die Privilegien und Immunitäten der Spezialorganisationen der Vereinten Nationen vom 21. November 1947 (GBl. II Nr. 9 S. 181)
- von Ausfuhrbeschränkungen befreit sind.
- (2) Die Ausfuhrsendung ist der Ausgangszollstelle zu stellen, wenn diese die Gestellung verlangt. Der Ausführer oder Versender (§ 15 Abs. 1) hat bei der Ausfuhr der Ausgangszollstelle, bei Versand durch die Post der Postanstalt oder bei Warenbeförderungen im Eisenbahnverkehr dem Versandbahnhof schriftlich zu erklären, daß ein Fall des Absatzes 1 vorliegt. Die Erklärung ist der Ausfuhrsendung beizufügen; sie kann auch auf einem Begleitpapier oder dem Packstück abgegeben werden. Die Sätze 2 und 3 gelten nicht,
- wenn sich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Anwendung des Absatzes 1 aus der Art der Ausfuhrsendung oder aus sonstigen Umständen ergeben oder
 - wenn Waren der in Absatz 1 Ziff. 10 genannten Art auf Schiffe in Seehäfen verbracht werden.
- (3) Absatz 1 Ziff. 1 bis 7, 23, 24, 26, 27, 30, 34, 35, 38, 40, 46, 47 und 49 findet keine Anwendung auf die in § 6 Abs. 1 und § 7 Abs. 1 genannten Waren einschließlich der dort genannten Unterlagen; bei der Ausfuhr der Unterlagen bedarf es keiner zollamtlichen Behandlung nach § 11 Abs. 1.

§ 22

Kohleausfuhr

(1) Feste Brennstoffe, im im Wirtschaftsgebiet gewonnen oder produziert wurden, sind der Versandzollstelle weder zu stellen noch anzumelden.

(2) Die Oberfinanzdirektion kann vertrauenswürdigen Ausführern, die ständig zahlreiche Sendungen der in Absatz 1 genannten festen Brennstoffe ausführen, gestatten, an Stelle der Ausfuhrerklärung eine Ausfuhrkontrollmeldung für Kohle (Anlage A 4), soweit erforderlich mit Ergänzungsblättern (Anlage A ErgBl.) zu verwenden, wenn die fortlaufende, vollständige und richtige Erfassung der Ausfuhrsendungen nach der Art des betrieblichen Rechnungswesens, insbesondere mit Hilfe einer elektronischen Datenverarbeitungsanlage, gewährleistet ist. Soweit die Überwachung der Ausfuhr nicht beeinträchtigt wird, kann die Oberfinanzdirektion auch von der Vorlage der Ausfuhrkontrollmeldung für Kohle befreien. Diese Erleichterungen können unter den genannten Voraussetzungen auch auf Sendungen ausgedehnt werden, für die der Begünstigte als Versender (§ 15 Abs. 1) tätig wird.

§ 23

Vorschriften nach den §§ 8 und 30 GAW zur Durchführung des Internationalen Kakao-Übereinkommens von 1986 (Sonderdruck Nr. 1289 des Gesetzblattes)

(1) Die Ausfuhr der in Teil II Spalte 3 der Ausfuhrliste mit Kk gekennzeichneten Waren (Kakaobohnen und Kakaobohnenbruch, Kakaomasse, Kakaobutter, Kakaofett und Kakaopulver ohne Zusatz von Zucker oder anderen Süßmitteln) bedarf der Genehmigung. Dies gilt nicht, wenn der Ausgangszollstelle bei der Ausfuhr ein im Wirtschaftsgebiet ausgestelltes Wiederausfuhrzeugnis nach Absatz 2 vorgelegt wird.

(2) Das Wiederausfuhrzeugnis muß den Wirtschafts- und Kontrollregeln zum Internationalen Kakao-Übereinkommen in ihrer jeweils geltenden Fassung entsprechen. Änderungen dieser Regeln werden, soweit sie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betreffen, jeweils im amtlichen Bekanntmachungsblatt bekanntgemacht.

(3) Eine Ausfuhrgenehmigung und ein Wiederausfuhrzeugnis sind nicht erforderlich

1. bei der Ausfuhr der in Absatz 1 genannten Waren, die einfuhrrechtlich nicht abgefertigt worden sind (§ 36 Abs. 3 Ziff. 5);
2. bei der Ausfuhr der in Absatz 1 genannten Waren bis zu einem Eigengewicht von 25 kg je Ausfuhrsendung;
3. bei der Ausfuhr von Kakaopulver ohne Zusatz von Zucker oder anderen Süßmitteln, in Einzelhandelspackungen mit einem Eigengewicht von weniger als 3,5 kg;
4. bei Ausfuhr im erleichterten Verfahren nach § 21 Abs. 1 Ziff. 8, 13, 20, 22, 23, 29, 37, 40 und 47.

Kapitel III Wareneinfuhr

1. Titel Beschränkungen

§ 24

Beschränkung nach § 15 GAW

(1) Bei der genehmigungsfreien Einfuhr bedarf die Vereinbarung oder Inanspruchnahme einer Lieferfrist der Genehmigung, wenn

1. die für den Bezug der Ware aus dem betreffenden Einkaufsland (§ 25 Abs. 4) handelsübliche Lieferfrist,
2. eine Lieferfrist von vierundzwanzig Monaten nach Vertragsabschluß,
3. eine Lieferfrist, die in der Einfuhrliste für den Bezug einzelner Waren vorgesehen ist,

überschritten wird.

(2) Absatz 1 gilt nicht für die Einfuhr von

1. Schwefelkies, Schwefel, Rohphosphat, natürlichem Natriumborax, Eisenerzen und ihren Konzentraten sowie Schwefelkiesabbränden, NE-metallurgischen Erzen, Titanschlacke, Selen, Ethylen, Propylen, Butadien, Cyclohexan, Benzol, Toluol, Styrol, Silber in Rohform, Gold in Rohform, Platin, Palladium, Rhodium, Iridium, Osmium und Ruthenium in Rohform oder als Pulver, Abfällen und Schrott von Edelmetallen und Vorstoffen von Nichteisenmetallen,
2. elektrischem Strom.

2. Titel

Verfahrens- und Meldevorschriften nach § 30 GAW

§ 25

Begriffsbestimmungen

(1) Einführer ist, wer Waren in das Wirtschaftsgebiet verbringt oder verbringen läßt. Liegt der Einfuhr ein Vertrag mit einem Gebietsfremden über den Erwerb von Waren zum Zwecke der Einfuhr (Einfuhrvertrag) zugrunde, so ist nur der gebietsansässige Vertragspartner Einführer. Wer lediglich als Spediteur oder Frachtführer oder in einer ähnlichen Stellung bei dem Verbringen der Waren tätig wird, ist nicht Einführer.

(2) Einfuhrsendung ist die Warenmenge, die an demselben Tage von demselben Lieferer an denselben Einführer abgesandt worden ist und von derselben Zollstelle abgefertigt wird.

(3) Der Begriff „freier Verkehr“ bestimmt sich nach § 5 Abs. 4 des Zollgesetzes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4) Einkaufsland ist das Land in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in dem der Gebietsfremde ansässig ist, von dem der Gebietsansässige die Waren erwirbt. Dieses Land gilt auch dann als Einkaufsland, wenn die Waren an einen anderen Gebietsansässigen weiterveräußert werden. Liegt kein Rechtsgeschäft über den Erwerb von Waren zwischen einem Gebietsansässigen und einem Gebietsfremden vor, so gilt als Einkaufsland das Land in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in dem die Verfügungsberechtigte Person, die die Waren in das Wirtschaftsgebiet verbringt oder verbringen läßt, ansässig ist; ist die

Verfügungsberechtigte Person, die die Waren in das Wirtschaftsgebiet verbringt oder verbringen läßt, im Wirtschaftsgebiet ansässig, so gilt als Einkaufsland das Versendungsland.

1. Untertitel

Genehmigungsfreie Einfuhr

§ 26

Antrag auf Einfuhrabfertigung

(1) Der Einführer hat die Einfuhrabfertigung bei einer Zollstelle zu beantragen. Er hat dabei die handelsübliche oder sprachgebräuchliche Bezeichnung der Ware sowie die Nummer des Warenverzeichnisses für die Außenhandelsstatistik anzugeben. An Stelle des Einführers kann ein Gebietsansässiger im eigenen Namen die Einfuhrabfertigung für Waren beantragen, die auf Grund eines Einfuhrvertrages geliefert werden, wenn er

1. als Handelsvertreter des gebietsfremden Vertragspartners am Abschluß des Einfuhrvertrages mitgewirkt hat oder
2. in Ausübung seines Gewerbes auf Grund eines Vertrages mit dem gebietsfremden Vertragspartner
 - a) an der Beförderung der Waren mitwirkt oder
 - b) den Zollantrag auf Abfertigung der Waren zum freien Verkehr stellt.

(2) Bei der Einfuhrabfertigung sind vorzulegen

1. die Rechnung oder sonstige Unterlagen, aus denen das Einkaufs- oder Versendungsland und das Ursprungsland der Waren ersichtlich sind,
2. ein Ursprungszeugnis, wenn die Waren in Spalte 5 der Einfuhrliste
 - a) mit „U“ gekennzeichnet sind oder
 - b) mit „UE“ gekennzeichnet sind und Ursprungsland Hongkong, Singapur oder Thailand ist,
 oder eine Ursprungserklärung, wenn die Waren, ausgenommen die Fälle von Buchstabe b, in Spalte 5 der Einfuhrliste mit „UE“ gekennzeichnet sind,

(3) Der Antrag auf Einfuhrabfertigung ist zu stellen

1. mit dem Zollantrag auf Abfertigung zum freien Verkehr, zu einem Freigutverkehr oder zur Zollgutverwendung, bei der Einfuhr in einem Sammelzollverfahren nach § 12 Abs. 3, § 13 oder § 35 des Zollgesetzes jedoch mit der Sammelzollanmeldung,
2. mit der Abgabe der Zollanmeldung für Waren, die aus einem offenen Zollager durch Anschreibung in einen Freigutverkehr oder eine Zollgutverwendung des Lagerinhabers übergeführt oder an einen anderen abgegeben werden, dem ein solcher Verkehr bewilligt ist oder der zur Freigutverwendung berechtigt ist,
3. für Waren, die zur vorübergehenden Zollgutverwendung eingeführt worden sind, sobald diese Waren als in den freien Verkehr entnommen gelten oder in rechtlich geregelten Fällen der zollamtlichen Überwachung entzogen werden oder
4. vor Gebrauch, Verbrauch, Bearbeitung oder Verarbeitung der Waren in einem Freihafen.

Abweichend von Satz 1 Ziffer 1 kann die Zollstelle verlangen, daß die Einfuhrabfertigung

1. bei Zollabfertigung nach vereinfachter Zollanmeldung mit der Abgabe der vereinfachten Zollanmeldung,
2. bei Zollabfertigung nach Aufzeichnung mit der Abgabe der Aufzeichnungsanzeige,
3. bei Zollanmeldung nach Gestellungsbefreiung unverzüglich nach dem Verbringen der Waren an den dafür bestimmten Ort

zu beantragen ist, wenn dies zur Sicherung der einfuhrrechtlichen Belange erforderlich ist.

(4) Der Antrag auf Einfuhrabfertigung kann mit dem Zollantrag auf Abfertigung zur Zollgutlagerung, bei der Einfuhr in einem Sammelzollverfahren nach § 12 Abs. 3, § 13 oder § 35 des Zollgesetzes jedoch mit der Sammelzollanmeldung, oder während der Lagerung in einem offenen Zollager gestellt werden. Mit dem Zollantrag auf Abfertigung

zum Zollgutversand und während der Zollgutlagerung in Zollniederlagen oder Zollverschlußlagern kann der Antrag auf Einfuhrabfertigung nur gestellt werden, wenn ein dringendes wirtschaftliches Bedürfnis dargetan wird; der Antrag kann zurückgewiesen werden, wenn zwingende dienstliche Gründe entgegenstehen. Bei der Einlagerung und während der Lagerung in einem Freihafen kann der Antrag nur gestellt werden, wenn die Waren dort überwacht werden können.

(5) Bei der Einfuhr von Wasser, elektrischem Strom sowie Stadtgas, Ferngas und ähnlichen Gasen in Leitungen entfällt die Einfuhrabfertigung.

§ 27

Verfahren bei der Einfuhrabfertigung

(1) Die Zollstelle prüft die Zulässigkeit der Einfuhr. Sie lehnt die Einfuhrabfertigung ab, wenn eine für die Einfuhr erforderliche Einfuhrgenehmigung oder Einfuhrlizenz nicht vorliegt oder wenn die Waren nicht den Angaben in den nach § 26 Abs. 2 vorzulegenden Unterlagen entsprechen.

(2) Die Einfuhrabfertigung darf nur bis zum Ende des zweiten Monats nach Ablauf der gemäß § 24 zulässigen oder genehmigten Lieferfrist vorgenommen werden.

(3) Für die Einfuhrabfertigung gelten im übrigen die Zollvorschriften über die Erfassung des Warenverkehrs und die Zollbehandlung sinngemäß.

(4) Die Zollstelle vermerkt die Einfuhrabfertigung im Zollbefund.

§ 28

Ursprungszeugnis und Ursprungserklärung

(1) Bei der Einfuhrabfertigung von Waren, die in Spalte 5 der Einfuhrliste mit „U“ oder „UE“ gekennzeichnet sind, ist weder ein Ursprungszeugnis noch eine Ursprungserklärung vorzulegen, wenn es sich nicht um Waren des Abschnitts XI der Einfuhrliste handelt und der Wert der in der Einfuhrsendung enthaltenen Waren, für die ein Ursprungszeugnis oder eine Ursprungserklärung vorgeschrieben ist, zweitausend Deutsche Mark nicht übersteigt.

(2) Das Ursprungszeugnis muß von einer berechtigten Stelle des Ursprungslandes ausgestellt sein. Der Minister für Wirtschaft macht die berechtigten Stellen im amtlichen Bekanntmachungsblatt bekannt. Ist das Versendungsland nicht das Ursprungsland, so genügt die Vorlage eines Ursprungszeugnisses einer berechtigten Stelle des Versendungslandes.

§ 29

Verfahrensvorschrift nach §§ 11 und 30 GAW

(1) Das Amt für Außenwirtschaft stellt im Rahmen der internationalen Zusammenarbeit bei der Ausfuhrkontrolle auf Antrag für die Einfuhr von Waren Internationale Einfuhrbescheinigungen (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s) und Wareneingangsbescheinigungen (Delivery Verification Certificates) aus.

(2) Der gebietsansässige Einführer als Antragsberechtigter im Sinne dieser Vorschrift hat die Internationale Einfuhrbescheinigung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E 6, die Wareneingangsbescheinigung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E 7 zu beantragen und die erforderlichen Angaben zu machen.

(3) Die Einfuhr der in dem Antrag auf Internationale Einfuhrbescheinigung bezeichneten Ware ist dem Amt für Außenwirtschaft unverzüglich nachzuweisen. Gibt der Antragsteller die Einfuhrabsicht auf, so hat er dies unverzüglich dem Amt für Außenwirtschaft anzuzeigen und ihm unverzüglich die Bescheinigung zurückzugeben oder über ihren Verbleib Mitteilung zu machen. Will er die Ware in ein anderes Land verbringen, so hat er, bevor die Ware das Versendungsland verläßt, vom Amt eine neue Bescheinigung zu erwirken, die dieses andere Land nennt.

(4) § 3 Abs. 1 und Abs. 2 Satz 1 GAW ist entsprechend anwendbar.

2. Untertitel

Genehmigungsbedürftige Einfuhr

§ 30

Einfuhrgenehmigung

(1) Die Einfuhrgenehmigung ist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E 3 zu beantragen und zu erteilen. Antragsberechtigt ist nur der Einführer. Die Genehmigungsstellen können abweichend von Satz 1

1. im Wege der Ausschreibung vorschreiben, daß die Einfuhrgenehmigung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E 3 a beantragt wird,
2. vertrauenswürdigen Einführern, die ständig zahlreiche Sendungen einführen,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und Bedingungen gestatten, Anträge auf Einfuhrgenehmigung in anderer Weise, insbesondere durch Datenfernübertragung, zu stellen,
3. die Einfuhrgenehmigung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E 5 erteilen.

(2) Auf einem Vordruck können Anträge für verschiedenartige Waren gestellt werden, wenn

1. sie in derselben Ausschreibung genannt sind,
2. sie zu demselben Zuständigkeitsbereich nach Spalte 3 der Einfuhrliste gehören und
3. ihr Einkaufsland dasselbe Land ist.

(3) Die Genehmigungsstellen können verlangen, daß für bestimmte Waren oder Warengruppen getrennte Anträge gestellt werden, soweit es zur Überwachung der Einfuhr, zur Beschleunigung des Genehmigungsverfahrens oder zur Wahrung sonstiger durch das GAW geschützter Belange erforderlich ist. Falls getrennte Anträge verlangt werden, soll darauf in der Ausschreibung hingewiesen werden.

(4) Die Genehmigungsstellen sollen Anträge, die innerhalb einer angemessenen Frist nach der Ausschreibung bei ihnen eingehen, als gleichzeitig gestellt behandeln. Die Frist soll in der Ausschreibung bekanntgegeben werden.

§ 31

Einfuhrabfertigung

(1) Für die genehmigungsbedürftige Einfuhr gelten die §§ 26, 27 Abs. 1, 3 und 4 und § 28 Abs. 2 mit der Maßgabe, daß bei der Einfuhrabfertigung zusätzlich die Einfuhrgenehmigung sowie in den Fällen, in denen dies die Einfuhrliste oder die Einfuhrgenehmigung vorschreibt, ein Ursprungszeugnis oder eine Ursprungserklärung vorzulegen ist.

(2) Die Zollstelle vermerkt auf der Einfuhrgenehmigung den Wert oder die Menge der abgefertigten Waren.

3. Titel

Sonderregelung nach § 14 Abs. 5 und § 30 GAW

§ 32

Erleichtertes Verfahren

(1) Gebietsansässige und Gebietsfremde dürfen ohne Einfuhrgenehmigung einführen

1. belichtete und entwickelte kinematographische Filme und die dazugehörigen Tonträger;
2. a) War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Waren, die in Spalte 3 der Einfuhrliste mit 01 bis 20 gekennzeichnet sind) bis zu einem Wert von eintausend Deutsche Mark je Einfuhrsendung,
- b) Waren de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Waren, die in Spalte 3 der Einfuhrliste mit 51 bis 54 oder 60 gekennzeichnet sind), ausgenommen Saatgut, bis zu einem Wert von zweihundertfünfzig Deutsche Mark je Einfuhrsendung,

das erleichterte Verfahren gilt nicht für die Einfuhr aus einem Zollfreigebiet oder einem Zollverkehr sowie für die Einfuhr von

- Waren, die zum Handel oder zu einer anderen gewerblichen Verwendung bestimmt sind;
3. Muster und Proben für einschlägige Handelsunternehmen oder Verarbeitungsbetriebe
 - a) von War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bis zu einem Wert von fünfhundert Deutsche Mark je Einfuhrsendung,
 - b) von Erzeugnissen de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is zu einem Wert von einhundert Deutsche Mark je Einfuhrsendung, ausgenommen Saatgut;
 bei der Bemessung des Wertes unentgeltlich gelieferter Muster und Proben bleiben Vertriebskosten außer Betracht;
 4. Geschenke bis zu einem Wert von eintausend Deutsche Mark je Einfuhrsendung;
 5. Briefmarken und Ganzsachen sowie die dazugehörenden Alben;
 6. Drucksachen im Sinne der postalischen Vorschriften;
 7. Kunstgegenstände, die von Gebietsansässigen während eines vorübergehenden Aufenthaltes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geschaffen worden sind;
 8. Kunstgegenstände, Sammlungsstücke und Antiquitäten, die nicht zum Handel bestimmt sind;
 9. Akten, Geschäftspapiere, Urkunden, Korrekturbogen, andere Schriftstücke sowie Manuskripte, die nicht als Handelsware eingeführt werden;
 10. Fernsehbandaufzeichnungen;
 11. Teile zur Ausbesserung von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zugelassenen Kraftfahrzeugen, die während der vorübergehenden Verwendung im Wirtschaftsgebiet reparaturbedürftig geworden sind;
 12. Luftfahrzeuge und Luftfahrzeugteile, die zu ihrer Wartung oder Ausbesserung im Wirtschaftsgebiet oder nach ihrer Wartung oder Ausbesserung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im Rahmen von Wartungsverträgen eingeführt werden;
 13. Luftfahrzeuge, die vorübergehend für Vorführzwecke ausgeführt worden sind;
 14. Bunkerkohle und sonstige Betriebsstoffe für Schiffe und Luftfahrzeuge zur zollfreien Verwendung unter zollamtlicher Überwachung, Treibstoffe, die Landkraftfahrzeuge in den dafür eingebauten Behältern zum Eigenbetrieb mitführen;
 15. Waren, die von einem Gebietsfremden auf eigene Rechnung einem Gebietsansässigen zum Ausbessern von Schiffen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wenn das Schiff in einem Freihafen oder unter zollamtlicher Überwachung für Rechnung des Gebietsfremden ausgebessert wird;
 16. gebrauchte Kleidungsstücke, die nicht zum Handel bestimmt sind;
 17. Waren, die Aussteller zum unmittelbaren Verzehr als Kostproben auf Messen oder Ausstellungen einführen, wenn der Wert der in einem Kapitel der Einfuhrliste zusammengefaßten Waren sechstausend Deutsche Mark je Messe oder Ausstellung nicht übersteigt; hierbei ist der Wert der Waren mehrerer Aussteller; die sich durch dieselbe Person vertreten lassen, zusammenzurechnen;
 18. Fische, Seetang, Seegrass und andere Waren, die Gebietsansässige auf hoher See von DDR-Schiffen aus gewinnen und unmittelbar in das Wirtschaftsgebiet verbringen;
 19. Waren bis zu einem Wert von zehntausend Deutsche Mark, die von DDR-Schiffen aus einem an den Küsten des Wirtschaftsgebietes gestrandeten Schiff geborgen oder aus einem auf hoher See beschädigten Schiff gerettet und unmittelbar in das Wirtschaftsgebiet verbracht werden, von DDR-Schiffen aufgefishetes und an das Land gebrachtes seetrittiges Gut;
 20. Waren, welche die im Wirtschaftsgebiet stationierten ausländischen Truppen, die ihnen gleichgestellten Organisationen, das zivile Gefolge sowie deren Mitglieder und Angehörige der Mitglieder zu ihrer eigenen Verwendung einführen;
 21. Waren zur Lieferung an die im Wirtschaftsgebiet stationierten ausländischen Truppen, die ihnen gleichgestellten Organisationen, das zivile Gefolge sowie an ihre Mitglieder und die Angehörigen der Mitglieder, wenn nach zwischenstaatlichen Verträgen Zollfreiheit gewährt wird;
 22. Zollgut aus dem Besitz der im Wirtschaftsgebiet stationierten ausländischen Truppen, der ihnen gleichgestellten Organisationen, des zivilen Gefolges sowie der Mitglieder und der Angehörigen der Mitglieder;
 23. Abfälle, die im Wirtschaftsgebiet bei der Bearbeitung, Verarbeitung oder Ausbesserung von eingeführten und zur Wiederausfuhr bestimmten Waren anfallen, wenn die Überlassung der Abfälle kein Entgelt gewährt wird;
 24. Abfälle, Fegsel und zum ursprünglichen Zweck nicht mehr verwendbare Waren, die in Häfen, Zollagern oder in einem sonstigen Zollverkehr im Wirtschaftsgebiet anfallen;
 25. Waren, die zum vorübergehenden Gebrauch in ein Zollfrei-gebiet oder zur vorübergehenden Zollgutverwendung in das Wirtschaftsgebiet verbracht worden sind und zum ursprünglichen Zweck nicht mehr verwendet werden können, oder Teile davon, die bei der Ausbesserung im Wirtschaftsgebiet anfallen;
 26. Ersatzlieferungen für eingeführte Waren, die in fremde Währungsgebiete zurückgesandt worden sind oder zurückgesandt werden sollen oder unter zollamtlicher Überwachung vernichtet worden sind, und handelsübliche Nachlieferungen zu bereits eingeführten Waren;
 27. Ballast, der nicht als Handelsware eingeführt wird;
 28. Hausmüll;
 29. Brieftauben, die nicht als Handelsware eingeführt werden;
 30. Waren zur Verwendung bei der Ersten Hilfe in Katastrophenfällen;
 31. Eis zum Frischhalten von Waren bei der Einfuhr;
 32. Reisegerät und Reisemitbringsel, wenn die Waren frei von Eingangsabgaben sind, nicht zum Handel bestimmte Waren bis zu einem Wert von dreitausend Deutsche Mark, die Reisende mitführen;
 33. im Verkehr zwischen Personen, die in benachbarten, durch zwischenstaatliche Abkommen festgelegten Zollgrenzzonen oder in benachbarten Zollgrenzbezirken ansässig sind (kleiner Grenzverkehr);
 - a) von diesen Personen mitgeführte Waren, die nicht zum Handel bestimmt sind und deren Wert eintausend Deutsche Mark täglich nicht übersteigt;
 - b) Waren, die diesen Personen als Teil des Lohnes gewährt werden;
 34. Tiere, Saatgut, Düngemittel, Fahrzeuge, Maschinen und sonstige Waren, deren Einfuhr durch die örtlichen und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in Zollgrenzzonen oder Zollgrenzbezirken bedingt ist und die nach zwischenstaatlichen Verträgen von Einfuhrbeschränkungen befreit sind;
 35. Klärschlamm und Rechengut, die beim Betrieb von grenzüberschreitenden Gemeinschaftsanlagen zur Abwasserreinigung in Zollgrenzzonen oder Zollgrenzgebieten anfallen;
 36. Erzeugnisse des Ackerbaus, der Viehzucht, des Gartenbaus und der Forstwirtschaft solcher grendurchschnittlicher Betriebe, die vom Wirtschaftsgebiet aus bewirtschaftet werden, wenn für diese Erzeugnisse außertarifliche Zollfreiheit gewährt wird;
 37. Deputatkohle;
 38. Baubedarf, Instandsetzungs- und Betriebsmittel für Stauwerke, Kraftwerke, Brücken, Straßen und sonstige Bauten, die beiderseits der Grenze errichtet, betrieben oder benutzt werden;
 39. Waren, die nach §§ 33, 34, 36, 37, 39 bis 43 und 45 der Allgemeinen Zollordnung zollfrei eingeführt werden können; die Regelung gilt entsprechend, wenn solche Waren aus einem anderen Grund zollfrei eingeführt werden können;
 40. Umschließungen und Verpackungsmittel, Behälter (Container) und sonstige Großraumbehältnisse, die wie diese verwendet werden, Paletten, Druckbehälter für verdichtete oder flüssige Gase, Kabeltrommeln und Kettbäume, soweit diese nicht Gegenstand eines Handelsgeschäftes sind, sowie zum Frischhalten beige-packtes Eis;
 41. Waren in Zollfrei-gebiete unter den Voraussetzungen und Bedingungen, unter denen sie nach Ziffern 32 und 39 im erleichterten Verfahren eingeführt werden können;

42. Waren, für die außertarifliche Zollfreiheit gewährt wird
- nach den Vorschriften, die beim Beitritt zu zwischenstaatlichen Verträgen erlassen wurden,
 - nach der Bekanntmachung vom 28. August 1975 über den Beitri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Konvention vom 21. November 1947 über die Privilegien und Immunitäten der Spezialorganisationen der Vereinten Nationen (GBl. II Nr. 9. S. 181),
 -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zollrechtliche Behandlung von Waren, die in das Zollgebiet zurückkehren,
 -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vorübergehende Verwendung.

(2) Die §§ 24, 26 bis 28, 30, 31 gelten nicht für die in Absatz 1 genannten Einfuhren. Ein Ursprungszeugnis oder eine Ursprungserklärung nach Spalte 5 der Einfuhrliste ist nicht erforderlich. Der Einführer oder die in § 26 Abs. 1 Satz 3 genannte Person hat die Waren einer Zollstelle zu gestellen oder bei ihr anzumelden. Für den Zeitpunkt der Gestellung oder Anmeldung gilt § 26 Abs. 3 sinngemäß. Der Einführer hat der Zollstelle auf Verlangen nachzuweisen, daß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vorliegen. Die Sätze 3 bis 5 gelten nicht für Waren, die nach den Zollvorschriften von der Gestellung und Anmeldung befreit sind.

(3) Gebietsfremde dürfen War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genehmigungsfrei einführen, die

- sich in einem besonderen Zollverkehr befinden und auf Messen oder Ausstellungen veräußert werden oder
- nachweislich auf Messen oder Ausstellungen veräußert werden sollen,

soweit die Einfuhr der Waren durch Gebietsansässige genehmigungsfrei zulässig ist.

§ 33

Lagerung in Freihäfen oder Zollagern

Gebietsansässige und Gebietsfremde dürfen ohne Einfuhrgenehmigung Waren zur Lagerung in Freihäfen oder Zollagern einführen. Die Einfuhrgenehmigung sowie die Einfuhrabfertigung sind in diesen Fällen erst erforderlich, wenn die Waren in den freien Verkehr verbracht werden. Dem Verbringen der Waren in den freien Verkehr stehen insoweit die Abfertigung oder die Überführung der Waren zur aktiven Eigenveredelung, zur Umwandlung, zur Freigutverwendung oder zur bleibenden Zollgutverwendung sowie der Gebrauch, der Verbrauch und die Bearbeitung oder die Verarbeitung für Rechnung eines Gebietsansässigen in einem Freihafen gleich. Das Hauptzollamt kann vertrauenswürdigen Einführern gestatten, die Einfuhrabfertigung für aus einem offenen Zollager entnommene Waren mit der Abgabe der Zahlungsanmeldung zu beantragen, spätestens jedoch am 15. Tage des auf die Entnahme folgenden Kalendermonats.

§ 34

Lagerung im freien Verkehr

Sollen eingangsabgabefreie Waren, deren Einfuhr der Genehmigung bedarf und deren spätere Verwendung ungewiß ist, in den freien Verkehr zur Lagerung eingeführt werden, so ist im Antrag auf Einfuhrgenehmigung „Lagerung im freien Verkehr“ anzugeben. Die Einfuhrgenehmigung kann unter der Auflage erteilt werden, daß die Waren ohne Zustimmung der Genehmigungsstelle nur zur Ausfuhr ausgelagert werden dürfen.

§ 35

Aktive Lohnveredelung im zollrechtlichen Veredelungsverkehr oder in den Freihäfen

(1) Gebietsansässige dürfen ohne Einfuhrgenehmigung Waren einführen, die

- zur aktiven Lohnveredelung im zollrechtlichen Veredelungsverkehr abgefertigt oder angeschrieben werden,
- als Nachholgut im Rahmen einer aktiven Lohnveredelung zum freien Verkehr abgefertigt oder angeschrieben werden,

- in einen Freihafen für Rechnung eines Gebietsfremden bearbeitet oder verarbeitet werden.

Bei der Einfuhrabfertigung brauchen kein Ursprungszeugnis, keine Ursprungserklärung und keine anderen Nachweise über das Ursprungsland und das Einkaufsland der Waren vorgelegt zu werden.

(2) Eine Einfuhrgenehmigung ist jedoch erforderlich,

- soweit für die nach Absatz 1 Satz 1 Ziffer 1 eingeführten Waren innerhalb der zollamtlich festgesetzten Frist keine entsprechenden Mengen veredelter Waren oder an deren Stelle entsprechende Mengen nicht veredelter Waren oder Zwischenerzeugnisse gestellt werden oder soweit die eingeführten Waren, entsprechende Mengen veredelter Waren oder Zwischenerzeugnisse zum freien Verkehr, zur aktiven Eigenveredelung, zur Umwandlung, zur Freigutverwendung oder zur bleibenden Zollgutverwendung abgefertigt werden,
- soweit die nach Absatz 1 Satz 1 Ziffer 3 eingeführten Waren in einem Freihafen gebraucht, verbraucht oder für Rechnung eines Gebietsansässigen bearbeitet oder verarbeitet werden.

§ 36

Vorschriften nach §§ 8 und 30 GAW zur Durchführung des Internationalen Kakao-Übereinkommens von 1986

(1) Bei der Einfuhr von Kakaobohnen und Kakaobohnenbruch, Kakaomasse, Kakaobutter, Kakaofett und Kakaool und Kakaopulver ohne Zusatz von Zucker oder anderen Süßmitteln ist der Zollstelle mit dem Antrag auf Einfuhrabfertigung ein Ursprungszeugnis, Wiederausfuhrzeugnis, Teilzeugnis, Zeugnis für die Einfuhr aus einem Nichtmitgliedland oder Ersatzzeugnis (Kakaozeugnis) nach Absatz 2 vorzulegen. Ursprungszeugnisse, Teilzeugnisse und Zeugnisse für die Einfuhr aus einem Nichtmitgliedland müssen mit Kakaomarken versehen sein. Wird ein Kakaozeugnis nicht vorgelegt, so bedarf die Einfuhr der Genehmigung.

(2) Das Kakaozeugnis muß den in § 23 Abs. 2 genannten Wirtschafts- und Kontrollregeln entsprechen.

(3) Eine Einfuhrgenehmigung und ein Kakaozeugnis sind nicht erforderlich

- bei der Einfuhr der in Absatz 1 genannten Waren bis zu einem Eigengewicht von 25 kg je Einfuhrsendung,
- bei der Einfuhr von Kakaopulver ohne Zusatz von Zucker oder anderen Süßmitteln in Einzelhandelspackungen mit einem Eigengewicht von weniger als 3,5 kg aus Ländern, die Einfuhrmitglieder des Internationalen Kakao-Übereinkommens von 1986 sind,
- bei Einfuhren im erleichterten Verfahren nach § 32 Abs. 1 Ziff. 17, 19, 20, 22 bis 24, 30, 32, 33 und 41 sowie Abs. 2,
 - wenn außertarifliche Zollbefreiung nach den §§ 36 und 40 bis 42 der Allgemeinen Zollordnung gewährt wird;
- bei der Einfuhr zur Lagerung in Freihäfen oder Zollagern ohne Einfuhrabfertigung nach § 33 Satz 1.

§ 37

Zwangsvollstreckung

Soll eine Zwangsvollstreckung in Waren vorgenommen werden, die sich in einem Freihafen oder einem Zollager befinden, so kann der Gläubiger eine Einfuhrgenehmigung sowie die Einfuhrabfertigung beantragen. Im Antrag auf Einfuhrgenehmigung ist zu vermerken: „Zwangsvollstreckung“.

Kapitel IV

Aus- und Einfuhrstatistik

§ 38

Meldevorschriften nach § 30 GAW

(1) Ausfuhren und Einfuhren von Waren sind vom Ausführer/Ver-sender bzw. Einführer/Empfänger zur statistischen Erfassung anzumelden.

(2) Der Ausführer/Versender bzw. Einführer/Empfänger erfüllt seine Pflicht zur statistischen Berichterstattung über die Aus- bzw. Einfuhr (Statistikanmeldung) mit der ordnungsgemäßen Übergabe des Warenbegleitdokuments an die Zolldienststelle zum Zeitpunkt des Grenzübertritts der Lieferung.

(3) Warenbegleitdokument zur Statistikanmeldung ist das EG-Einheitspapier — Exemplar 2 für die Ausfuhr, Exemplar 7 für die Einfuhr. Als Übergangsregelung für 1990 ist für die Statistikanmeldung die Verwendung der Währungsfaktura als Warenbegleitdokument noch zulässig.

(4) Aus dem Warenbegleitdokument müssen mindestens folgende Angaben ersichtlich sein:

1. Bezeichnung der Ware und 8-stellige ELN-Nummer;
2. Menge und Wert (frei Grenze DDR bzw. fob DDR-Hafen bei der Ausfuhr und cif-Entladehafen bei der Einfuhr) in fremder Währung und in Deutscher Mark;
3. Name und Anschrift (Land) des Empfängers (bei Ausfuhren) bzw. des Lieferers (bei Einfuhren);
4. Name und Anschrift des Ausführers/Versenders (bei Ausfuhren) bzw. des Einführers/Empfängers (bei Einfuhren);
5. Ursprungsland bei der Einfuhr bzw. Bestimmungsland bei der Ausfuhr.

(5) Sofern der Ausführer/Versender bzw. Einführer/Empfänger Inhaber einer Außenhandels-Statistik-Nummer¹ ist, gilt das Warenbegleitdokument nicht als Statistikanmeldung. In diesem Fall hat der Ausführer/Versender bzw. Einführer/Empfänger die statistischen Daten in dem Umfang und in der Art und Weise zu liefern, wie das bei Erteilung der Außenhandels-Statistik-Nummer festgelegt wurde.

(6) Die im Absatz 4 genannten Angaben sind vom Ausführer bzw. Einführer auf dem Warenbegleitdokument, das der Zolldienststelle zur Statistikanmeldung übergeben wird, zu ergänzen, falls sie auf diesem Dokument unvollständig sind.

(7) Von der Statistikanmeldung sind Ausführer/Versender bzw. Einführer/Empfänger befreit, wenn für die Sendungen die Befreiungstatbestände des § 21 Abs. 1 oder des § 32 Abs. 1 zutreffen.

(8) Die Bestimmungen der Absätze 4 bis 6 gelten nur als Übergangsregelung für 1990.

Kapitel V

Sonstiger Warenverkehr

1. Titel

Warendurchfuhr

§ 39

Beschränkungen nach den §§ 8 und 11 Abs. 1 GAW

(1) Die Durchfuhr der in Teil I Abschnitt A, B und C der Ausfuhrliste genannten Waren ist verboten, wenn die Waren

- 1 nicht in ein Land der Länderliste A/B als Bestimmungsland verbracht werden sollen,
- 2 aus einem in der Länderliste E aufgeführten Land oder für Rechnung einer in einem dieser Länder ansässigen Person versandt worden sind und
- 3 nicht
 - a) von einer Bescheinigung des Versendungslandes, daß die Waren ausgeführt werden dürfen (Durchfuhrberechtigungsschein), oder
 - b) im Falle der Versendung aus der Schweiz oder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von einer Abschrift der Ausfuhrgenehmigung des Versendungslandes begleitet werden.

(2) Die Durchfuhr der in Teil I Abschnitt C Ziffer 1461 der Ausfuhrliste genannten Hängegleiter bedarf der Genehmigung, wenn Empfangsland der Libanon, Libyen oder Syrien ist.

(3) Die Durchfuhr von Waren oder Unterlagen zur Fertigung von Ware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Entwicklung, dem Bau, der Erprobung oder dem Einsatz eines Ferngeschützes im Ausland stehen, ist verboten.

(4) Empfangsland ist das Land, in das die Waren verbracht werden sollen, ohne daß sie in Durchfuhrländern anderen als den mit der Beförderung zusammenhängenden Aufenthalten oder Rechtsgeschäften unterworfen werden sollen. Ist dieses Land nicht bekannt, so gilt als Empfangsland das letzte bekannte Land, nach dem die Waren abgesandt werden.

§ 40

Durchfuhrverfahren

(1) Die Ausgangszollstelle prüft beim Ausgang der Waren aus dem Wirtschaftsgebiet die Zulässigkeit der Durchfuhr. Sie kann zu diesem Zweck von dem Warenführer oder vo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weitere Angaben und Beweismittel verlangen. Im übrigen gelten die Zollvorschriften über die Erfassung des Warenverkehrs und die Zollbehandlung sinngemäß.

(2) Durchfuhrberechtigungsscheine müssen durch die in der Länderliste E aufgeführten Behörden ausgestellt sein. Durchfuhrberechtigungsscheine und Abschriften der Ausfuhrgenehmigung werden vier Monate nach dem Ausgang der Ware aus dem Versendungsland nicht mehr anerkannt.

(3) Die Ausgangszollstelle vermerkt den Ausgang der Waren auf dem Durchfuhrberechtigungsschein oder auf der Abschrift der Ausfuhrgenehmigung.

(4) § 12 Abs. 3 gilt entsprechend.

2. Titel

Transithandel

§ 41

Beschränkung nach § 11 Abs. 1 GAW

(1) Die Veräußerung der in Teil I der Ausfuhrliste genannten Waren im Rahmen eines Transithandelsgeschäftes bedarf der Genehmigung, sofern nicht Käufer- und Bestimmungsland Mitglied der Organisation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sind. Die Genehmigung ist nicht erforderlich, wenn die Ware im Rahmen des Transithandelsgeschäftes ausgeführt wird und die Ausfuhr nach § 6 einer Ausfuhrgenehmigung bedarf.

(2) Transithandelsgeschäfte sind Geschäfte, bei denen außerhalb des Wirtschaftsgebietes befindliche Waren oder in das Wirtschaftsgebiet verbrachte, jedoch einfuhrrechtlich noch nicht abgefertigte Waren durch Gebietsansässige von Gebietsfremden erworben und an Gebietsfremde veräußert werden; ihnen stehen Rechtsgeschäfte gleich, bei denen diese Waren vor der Veräußerung an Gebietsfremde an andere Gebietsansässige veräußert werden.

§ 42

Transithandelsgenehmigung

Die Transithandelsgenehmigung ist auf einem Vordruck nach Anlage T1 zu beantragen und zu erteilen.

§ 43

Verfahrensvorschrift nach §§ 11 und 30 GAW

Wer als Transithändler einer Internationalen Einfuhrbescheinigung (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oder einer Wareneingangsbescheinigung (Delivery Verification Certificate) bedarf, hat diese beim Amt für Außenwirtschaft zu beantragen. § 29 gilt entsprechend mit der Maßgabe, daß die Einfuhr in das im Antrag bezeichnete Käufer- oder Bestimmungsland nachzuweisen ist.

¹ Entspricht der bisherigen dreistelligen AHB-Nr.; erteilt vom Ministerium für Außenwirtschaft, jetzt vom Statistischen Amt der DDR, Abt. Außenwirtschaft.

Kapitel VI Dienstleistungsverkehr

1. Titel

Beschränkungen des aktiven Dienstleistungsverkehrs

§ 44

Beschränkung nach den §§ 9 und 11 Abs. 1 GAW

(1) Das Verchartern von Seeschiffen, welche die Flagge der DDR führen, bedarf der Genehmigung, wenn der Chartervertrag mit einem Gebietsfremden abgeschlossen wird, der in einem Land der Länderliste C ansässig ist.

(2) Die Mitwirkung von Gebietsansässigen als Stellvertreter, Vermittler oder in ähnlicher Weise beim Abschluß von Frachtverträgen zur Beförderung einzelner Güter (Stückgüter) durch Seeschiffe fremder Flagge zwischen einem Gebietsfremden, der nicht in einem Land der Länderliste F1 oder F2 ansässig ist, und einem weiteren Gebietsfremden bedarf der Genehmigung, wenn das Entgelt für die Beförderung eintausend Deutsche Mark übersteigt.

§ 45

Beschränkung nach § 9 Abs. 1 GAW

Der Abschluß und die Erfüllung von Verträgen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sowie die Geschäftsbesorgung durch Gebietsansässige für Gebietsfremde bedürfen insoweit der Genehmigung, als Gegenstand der Verträge oder der Geschäftsbesorgung die ständige Prüfung der Preise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ist, die für fremde Währungsgebiete bestimmt sind.

§ 46

Beschränkung nach § 9 Abs. 1 GAW

Der Abschluß von Verträgen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Seeschiffahrtsunternehmen bedarf insoweit der Genehmigung, als die Verträge Bestimmungen über die Aufteilung von Ladungen und Frächten enthalten.

§ 47

Beschränkung nach § 11 Abs. 1 GAW

(1) Der Einbau der in § 6 Abs. 1 Satz 1 genannten Waren in Schiffe oder Luftfahrzeuge von Gebietsfremden, die in einem Land der Länderliste C ansässig sind, bedarf der Genehmigung.

(2) Die Weitergabe von nicht allgemein zugänglichen Kenntnissen über die Fertigung der in § 6 Abs. 1 Satz 1 und § 7 Abs. 1 genannten Waren und über die in § 6 Abs. 1 Satz 2 genannten Technologien, technischen Daten und technischen Verfahren sowie die Weitergabe von in § 6 Abs. 1 Satz 1 erfaßten, nicht allgemein zugänglichen Datenverarbeitungsprogrammen (Software) an Gebietsfremde, die in einem Land ansässig sind, das nicht Mitglied der Organisation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ist, bedarf der Genehmigung. Als Gebietsfremde im Sinne des Satzes 1 sind auch solche natürlichen Personen anzusehen, deren Wohnsitz oder gewöhnlicher Aufenthalt im Wirtschaftsgebiet im Zeitpunkt der Weitergabe auf höchstens fünf Jahre befristet ist.

(3) Der Genehmigung bedürfen ferner die Erteilung von Lizenzen an Patente sowie die Weitergabe von nicht allgemein zugänglichen Kenntnissen an Gebietsfremde, die in der Republik Südafrika ansässig sind, soweit die Patente oder Kenntnisse die Fertigung oder Instandhaltung der in § 6 Abs. 1 Satz 1 genannten Waren betreffen.

§ 48

Beschränkung nach § 11 Abs. 1 GAW

Es ist Gebietsansässigen verboten, Verträge mit Gebietsfremden abzuschließen oder zu erfüllen oder für Gebietsfremde Geschäfte zu besorgen, wenn der Gegenstand der Verträge oder der Geschäftsbesorgung im Zusammenhang mit einem Projekt der Luftbetankung

von Flugzeugen oder mit der Errichtung oder dem Betrieb einer Anlage zur Herstellung von chemischen Waffen steht.

2. Titel

Beschränkung des passiven Dienstleistungsverkehrs

§ 49

Beschränkung nach § 22 GAW

(1) Der Abschluß von Frachtverträgen zur Beförderung einzelner Güter (Stückgüter) durch Seeschiffe fremder Flagge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die nicht in einem Land der Länderliste F1 und F2 ansässig sind, bedarf der Genehmigung, wenn das Entgelt für die Dienstleistung eintausend Deutsche Mark übersteigt.

(2) Das Chartern von Seeschiffen fremder Flagge bedarf der Genehmigung, wenn der Chartervertrag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die nicht in einem Land der Länderliste F2 ansässig sind, geschlossen wird.

§ 50

Beschränkung nach § 24 GAW

Rechtsgeschäfte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Gebietsfremden, die

1. das Mieten von Binnenschiffen, die nicht in einem Binnenschiffsregister im Wirtschaftsgebiet eingetragen sind,
2. die Beförderung von Gütern mit solchen Binnenschiffen oder
3. das Schleppen durch solche Binnenschiffe

im Güterverkehr innerhalb des Wirtschaftsgebietes zum Gegenstand haben, bedürfen der Genehmigung.

§ 51

Beschränkung nach § 25 GAW

(1) Rechtsgeschäfte zwischen Gebietsansässigen und Versicherungsunternehmen mit Sitz in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über

1. Schiffskasko- und Schiffshaftpflichtversicherungen oder
2. Luftfahrtversicherungen, ausgenommen Verkehrsfluggast-Unfallversicherungen,

bedürfen der Genehmigung.

(2) Eine Genehmigung ist nicht erforderlich, wenn das Rechtsgeschäft unter Mitwirkung einer Niederlassung oder Agentur vorgenommen wird, die ihre Tätigkeit auf Grund einer Genehmigung nach dem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ausübt.

3. Titel

Meldevorschriften nach § 30 GAW

§ 52

Meldungen im Seeverkehr

(1) Gebietsansässige, die ein Seeschiffahrtsunternehmen betreiben, haben

1. den Abschluß von Charter- und Frachtverträgen mit Gebietsfremden alsbald nach Vertragsabschluß,
2. die Durchführung von Charter- und Frachtverträgen mit Gebietsansässigen im Seeverkehr mit fremden Währungsgebieten alsbald nach Beginn der Durchführung des Vertrages

mit dem Vordruck „Aktive Dienstleistungen im Seeverkehr“ (Anlage S 1) zu melden. Dies gilt nicht für Frachtverträge im Linienverkehr, für Zeitcharterverträge sowie für Charterverträge, die mit der Maßgabe abgeschlossen werden, daß der Charterer die Schiffsbesatzung stellt (bare-boat-charter).

(2) Gebietsansässige haben den Abschluß von Charter- und Frachtverträgen mit Gebietsfremden zur Beförderung von Gütern durch Seeschiffe fremder Flagge außerhalb des Linienverkehrs mit

dem Vordruck „Passive Dienstleistungen im Seeverkehr“ (Anlage S 2) alsbald nach Vertragsabschluß zu melden.

(3) Gebietsansässige, die ein Seeschiffsunternehmen betreiben oder als Schiffsagenten für gebietsfremde Seeschiffsunternehmen tätig sind, haben die Aufnahme, Änderung oder Einstellung eines Linienverkehrs zwischen dem Wirtschaftsgebiet und Ländern der Länderliste F3 dreißig Tage vor der Aufnahme, Änderung oder Einstellung zu melden. In den Meldungen sind das Unternehmen, die Bezeichnung des Linienverkehrs, der Zeitpunkt der Aufnahme, Änderung oder Einstellung des Verkehrs, die Anlaufhäfen, die Abfahrthäufigkeit, die Zahl und die Merkmale der Schiffe und eine etwaige Mitgliedschaft in einer Linienkonferenz für das betreffende Fahrtgebiet anzugeben. Ferner ist die Beförderung von Gütern durch Seeschiffe, die in einem in Satz 1 genannten Linienverkehr fahren, alsbald nach Abfahrt der Schiffe aus dem Wirtschaftsgebiet oder nach ihrer Ankunft im Wirtschaftsgebiet mit dem Vordruck „Linienverkehr“ (Anlage S 3) zu melden. Die Sätze 1 bis 3 gelten auch für einen Linienverkehr zwischen einem fremden Wirtschaftsgebiet und Ländern der Länderliste F3, wenn die in Satz 1 genannten Seeschiffsunternehmen oder deren Agenten für die Beförderung der Güter zwischen dem Wirtschaftsgebiet und dem Fahrtgebiet sorgen.

(4) Ein Linienverkehr ist eine Schiffsverbindungs- und in einem bestimmten Fahrtgebiet mit regelmäßigen Abfahrten.

(5) Die Meldungen sind beim Ministerium für Verkehrswesen einzureichen.

§ 53

Meldungen über Rechte an audiovisuellen Werken

(1) Gebietsansässige haben den Abschluß von Verträgen, in denen sie Gebietsfremden Vorführungs- oder Senderechte an Spiel-, Kinder- oder Jugendfilmen mit einer Vorführungsdauer von mindestens neunundfünfzig Minuten einräumen, zu melden.

(2) Gebietsansässige haben den Abschluß von Verträgen, in denen sie von Gebietsfremden Vorführungs- oder Senderechte an Spiel-, Kinder- oder Jugendfilmen mit einer Vorführungsdauer von mindestens neunundfünfzig Minuten erwerben oder die Herstellung solcher Filme in Gemeinschaftsproduktion mit Gebietsfremden vereinbaren, zu melden.

(3) In den Meldungen sind der gebietsfremde Lizenzgeber oder -nehmer, Titel und Art des Films, sein Ursprungsland und Herstellungsjahr sowie das Auswertungsgebiet und die vereinbarte Lizenzgebühr anzugeben. Bei Gemeinschaftsproduktionen sind der gebietsfremde Gemeinschaftsproduzent, sein Anteil an den Gesamtkosten des Films in Deutscher Mark sowie Herstellungsjahr, Titel und Art des Films anzugeben. Die Meldungen sind vierteljährlich bis zum Ende des auf den Ablauf des Kalendervierteljahres folgenden Monats dem Ministerium für Medienpolitik für den Bereich des Fernsehens und dem Ministerium für Kultur für den Bereich der Filmwirtschaft abzugeben.

(4) Die Ministerien können für einzelne Meldepflichtige oder für Gruppen von Meldepflichtigen vereinfachte Meldungen oder Abweichungen von Meldefristen zulassen, soweit dafür besondere Gründe vorliegen oder der Zweck der Meldevorschriften nicht beeinträchtigt wird.

§ 54

Meldungen des Braugewerbes

(1) Gebietsansässige haben den Abschluß von Verträgen zu melden, in denen sie Gebietsfremden das Recht einräumen, Bier, das in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hergestellt ist, mit einer Bezeichnung oder Ausstattung zu vertreiben, die mit einer von den Gebietsansässigen zur Kennzeichnung des Ursprungs ihrer Erzeugnisse benutzten Bezeichnung oder Ausstattung übereinstimmt oder verwechselt werden kann. Das gleiche gilt für das Einbringen solcher Vertriebsrechte in ein Unternehmen in einem fremden Währungsgebiet.

(2) In den Meldungen sind die Person, der das Vertriebsrecht eingeräumt wird, das Ursprungsland, das Bestimmungsland und die

voraussichtliche Vertriebsmenge des Biers sowie die Bezeichnungen oder Ausstattungen anzugeben, mit denen das Bier vertrieben werden soll. Die Meldungen sind innerhalb zweier Wochen nach Abschluß des Vertrages dem Amt für Außenwirtschaft abzugeben.

Kapitel VII

Kapitalverkehr

1. Titel

Beschränkungen

§ 55

Beschränkungen nach § 26 GAW

Die Bewirkung von Zahlungen und sonstigen Leistungen zur Erfüllung einer Schuld, die vor dem 9. Mai 1945 gegenüber Gebietsfremden begründet wurden, bedarf der Genehmigung durch die Deutsche Bundesbank.

2. Titel

Meldevorschriften nach § 30 GAW

§ 56

Vermögensanlagen Ge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1) Gebietsansässige haben Leistungen, die sie

1. an Gebietsfremde oder für deren Rechnung an Gebietsansässige erbringen und welche die Anlage von Vermögen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zur Schaffung dauerhafter Wirtschaftsverbindungen (Direktinvestitionen) bezwecken, oder
2. von Gebietsfremden oder für deren Rechnung von Gebietsansässigen entgegennehmen und welche die Auflösung von Vermögen im Sinne von Ziffer 1 zur Folge haben,

nach § 57 zu melden, wenn sie in folgenden Formen vollzogen werden:

- a) ~~Gründung oder Erwerb sowie Auflösung oder Veräußerung von Unternehmen,~~
- b) Erwerb oder Veräußerung von Beteiligungen an Unternehmen,
- c) Errichtung oder Erwerb sowie Aufhebung oder Veräußerung von Zweigniederlassungen oder Betriebsstätten,
- d) Zuführung von Kapital zu Unternehmen, Zweigniederlassungen oder Betriebsstätten, die dem gebietsansässigen Kapitalgeber gehören oder an denen er beteiligt ist, sowie Rückführung von solchem Kapital,
- e) Gewährung von Krediten an Unternehmen, Zweigniederlassungen oder Betriebsstätten, die dem gebietsansässigen Kreditgeber oder einem von ihm abhängigen Unternehmen gehören oder an denen der gebietsansässige Kreditgeber oder ein von ihm abhängiges Unternehmen beteiligt ist, sowie Rückführung solcher Kredite.

(2) Ab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auf

1. Leistungen, die im Einzelfall den Wert von fünfzigtausend Deutsche Mark oder den Gegenwert in ausländischer Währung nicht übersteigen,
2. Leistungen, die sich auf die Anlage oder Auflösung von Vermögen in Unternehmen beziehen, an denen der Gebietsansässige oder ein von ihm abhängiges Unternehmen mit nicht mehr als 20 vom Hundert der Anteile beteiligt ist; das gilt auch für den Erwerb einer Beteiligung, sofern der Gebietsansässige nach dem Erwerb mit nicht mehr als 20 vom Hundert der Anteile an dem Unternehmen beteiligt ist, und für die Veräußerung einer Beteiligung, sofern der Gebietsansässige vor der Veräußerung mit nicht mehr als 20 vom Hundert der Anteile an dem Unternehmen beteiligt war,
3. Leistungen, die die Gewährung oder Rückführung von Krediten mit einer ursprünglich vereinbarten Laufzeit oder Kündigungsfrist von nicht mehr als zwölf Monaten zum Gegenstand haben,

4. Leistungen von Geldinstituten oder an Geldinstitute in der Form der Kreditgewährung oder Kreditrückführung (einschließlich der Begründung oder Rückführung von Guthaben).

(3) Die Meldevorschriften der §§ 65 bis 73 bleiben unberührt.

§ 57

Abgabe der Meldungen nach § 56

(1) Meldepflichtig ist der Gebietsansässige, der die Leistung in den Fällen des § 56 Abs. 1 erbringt oder entgegennimmt.

(2) Die Meldungen sind bis zum fünften Tage des auf den meldepflichtigen Vorgang folgenden Monats der Deutschen Bundesbank auf dem Vordruck „Vermögensanlagen Ge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Anlage K1) in dreifacher Ausfertigung zu erstatten. Sie sind bei der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abzugeben, in deren Bereich der Meldepflichtige ansässig ist. Die Deutsche Bundesbank übersendet je eine Ausfertigung der Meldungen dem Minister für Wirtschaft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 58

Vermögen Ge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1) Der Stand und ausgewählte Positionen der Zusammensetzung folgenden Vermögens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sind nach § 59 zu melden:

1. des Vermögens ein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wenn dem Gebietsansässigen mehr als zwan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der Stimmrechte an dem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2. des Vermögens eines gebietsfremden Unternehmers, wenn mehr als zwan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Stimmrechte an diesem Unternehmen einem von einem Gebietsansässigen abhängigen gebietsfremd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3. des Vermögens Gebietsansässiger in ihren gebietsfremden Zweigniederlassungen und auf Dauer angelegten Betriebsstätten.

(2) Ein gebietsfremdes Unternehmen gilt im Sinne des Absatzes 1 Ziff. 2 als von einem Gebietsansässigen abhängig, wenn dem Gebietsansässigen mehr als fünf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Stimmrechte an dem gebietsfremd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Wenn einem von einem Gebietsansässigen abhängigen gebietsfremden Unternehmen sämtliche Anteile oder Stimmrechte an einem anderen gebietsfremd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so ist auch das andere gebietsfremde Unternehmen und unter denselben Voraussetzungen jedes weitere gebietsfremde Unternehmen im Sinne des Absatzes 1 Ziffer 2 als von einem Gebietsansässigen abhängig anzusehen.

(3) Ab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wenn die Bilanzsumme d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an dem der Gebietsansässige oder ein anderes von ihm abhängiges gebietsfremdes Unternehmen beteiligt ist, oder das Betriebsvermögen der gebietsfremden Zweigniederlassung oder Betriebsstätte des Gebietsansässigen fünf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icht überschreitet. Absatz 1 findet ferner insoweit keine Anwendung, als dem Gebietsansässigen Unterlagen, die er zur Erfüllung seiner Meldepflicht benötigt, aus tatsächlichen oder rechtlichen Gründen nicht zugänglich sind.

§ 59

Abgabe der Meldungen nach § 58

(1) Die Meldungen sind einmal jährlich nach dem Stand des Bilanzstichtages des Meldepflichtigen oder, soweit der Meldepflichtige nicht bilanziert, nach dem Stand des 31. Dezember der Deutschen Bundesbank mit dem Vordruck „Vermögen Gebietsansässiger in fremden Währungsgebieten“ (Anlage K 3)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erstatten. Die Deutsche Bundesbank übersendet eine Ausfertigung der Meldungen dem Minister für Wirtschaft.

(2) Stimmt der Bilanzstichtag ein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an dem der Meldepflichtige oder ein anderes von ihm abhängiges gebietsfremdes Unternehmen beteiligt ist, nicht mit dem Bilanzstichtag des Meldepflichtigen oder, soweit der Meldepflichtige nicht

bilanziert, nicht mit dem 31. Dezember überein, so kann bei der Berechnung des Vermögens von dem diesem Zeitpunkt unmittelbar vorangegangenen Bilanzstichtag d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ausgegangen werden.

(3) Die Meldungen sind jeweils spätestens bis zum letzten Werktag des sechsten auf den Bilanzstichtag des Meldepflichtigen oder, soweit der Meldepflichtige nicht bilanziert, des sechsten auf den 31. Dezember folgenden Kalendermonats bei der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abzugeben, in deren Bereich der Meldepflichtige ansässig ist.

(4) Meldepflichtig ist der Gebietsansässige, dem das Vermögen unmittelbar oder über ein abhängiges gebietsfremdes Unternehmen am Bilanzstichtag des Gebietsansässigen oder, soweit er nicht bilanziert, am 31. Dezember jeweils zuzurechnen ist.

§ 60

Vermögensanlagen Gebietsfremder im Wirtschaftsgebiet

(1) Gebietsansässige haben Leistungen, die sie

1. von Gebietsfremden oder für deren Rechnung von Gebietsansässigen entgegennehmen und welche die Anlage von Vermögen im Wirtschaftsgebiet zur Schaffung dauerhafter Wirtschaftsverbindungen (Direktinvestitionen) bezwecken oder
2. an Gebietsfremde oder für deren Rechnung an Gebietsansässige erbringen und welche die Auflösung von Vermögen im Sinne von Ziff. 1 zur Folge haben,

nach § 61 zu melden, wenn sie in folgenden Formen vollzogen werden:

- a) Gründung oder Erwerb sowie Auflösung oder Veräußerung von Unternehmen,
- b) Erwerb oder Veräußerung von Beteiligungen an Unternehmen,
- c) Errichtung oder Erwerb sowie Aufhebung oder Veräußerung von Zweigniederlassungen oder Betriebsstätten,
- d) Zuführung von Kapital zu Unternehmen, Zweigniederlassungen oder Betriebsstätten, die dem gebietsfremden Kapitalgeber gehören oder an denen er beteiligt ist, sowie Rückführung von solchem Kapital,
- e) Gewährung von Krediten an Unternehmen, Zweigniederlassungen oder Betriebsstätten, die dem gebietsfremden Kreditgeber oder einem von ihm abhängigen Unternehmen gehören oder an denen der gebietsfremde Kreditgeber oder ein von ihm abhängiges Unternehmen beteiligt ist, sowie Rückführung solcher Kredite.

(2) Ab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auf

1. Leistungen, die im Einzelfall den Wert von fünfzigtausend Deutsche Mark oder den Gegenwert in ausländischer Währung nicht übersteigen,
2. Leistungen, die sich auf die Anlage oder Auflösung von Vermögen in Unternehmen beziehen, an denen der Gebietsfremde oder ein von ihm abhängiges Unternehmen mit nicht mehr als 20 vom Hundert der Anteile beteiligt ist; das gilt auch für den Erwerb einer Beteiligung, sofern der Gebietsfremde nach dem Erwerb mit nicht mehr als 20 vom Hundert der Anteile an dem Unternehmen beteiligt ist, und für die Veräußerung einer Beteiligung, sofern der Gebietsfremde vor der Veräußerung mit nicht mehr als 20 vom Hundert der Anteile an dem Unternehmen beteiligt war,
3. Leistungen, die die Gewährung oder Rückführung von Krediten mit einer ursprünglich vereinbarten Laufzeit oder Kündigungsfrist von nicht mehr als zwölf Monaten zum Gegenstand haben,
4. Leistungen von Geldinstituten oder an Geldinstitute in der Form der Kreditgewährung oder Kreditrückführung (einschließlich der Begründung oder Rückführung von Guthaben).

(3) Die Meldevorschriften der §§ 65 bis 73 bleiben unberührt.

§ 61

Abgabe der Meldungen nach § 60

(1) Meldepflichtig ist der Gebietsansässige, der die Leistung in den Fällen des § 60 Abs. 1 entgegennimmt oder erbringt.

(2) Die Meldungen sind bis zum fünften Tage des auf den meldepflichtigen Vorgang folgenden Monats der Deutschen Bundesbank auf dem Vordruck „Vermögensanlagen Gebietsfremder im Wirtschaftsgebiet“ (Anlage K 2) in dreifacher Ausfertigung zu erstatten. Im übrigen gilt § 57 Abs. 2 entsprechend.

§ 62

Vermögen Gebietsfremder im Wirtschaftsgebiet

(1) Der Stand und ausgewählte Positionen der Zusammensetzung folgenden Vermögens im Wirtschaftsgebiet sind nach § 63 zu melden:

1. des Vermögens eines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s, wenn einem Gebietsfremden oder mehreren wirtschaftlich verbundenen Gebietsfremden zusammen mehr als zwan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Stimmrechte an dem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2. des Vermögens eines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s, wenn mehr als zwan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Stimmrechte an diesem Unternehmen einem von einem Gebietsfremden oder einem von mehreren wirtschaftlich verbundenen Gebietsfremden abhängigen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3. des Vermögens Gebietsfremder in ihren gebietsansässigen Zweigniederlassungen und auf Dauer angelegten Betriebsstätten.

(2) Gebietsfremde sind als wirtschaftlich verbunden im Sinne des Absatzes 1 Ziffer 1 und 2 anzusehen, wenn sie gemeinsam wirtschaftliche Interessen verfolgen; dies gilt auch, wenn sie gemeinsam wirtschaftliche Interessen zusammen mit Gebietsansässigen verfolgen. Als solche wirtschaftlich verbundene Gebietsfremde gelten insbesondere:

1. natürliche und juristische gebietsfremde Personen, die sich zum Zwecke der Gründung oder des Erwerbs eines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s, des Erwerbs von Beteiligungen an einem solchen Unternehmen oder zur gemeinsamen Ausübung ihrer Anteilsrechte an einem solchen Unternehmen zusammengeschlossen haben; ferner natürliche und juristische gebietsfremde Personen, die gemeinsam wirtschaftliche Interessen verfolgen, indem sie an einem oder mehreren Unternehmen Beteiligungen halten;
2. natürliche gebietsfremde Personen, die miteinander verheiratet oder in gerader Linie verwandt, verschwägert oder durch Adoption verbunden oder in der Seitenlinie bis zum dritten Grade verwandt oder bis zum zweiten Grade verschwägert sind, oder
3. juristische gebietsfremde Personen, die im Sinne des § 15 des Aktiengesetzes miteinander verbunden sind.

(3) Ein gebietsansässiges Unternehmen gilt im Sinne des Absatzes 1 Ziff. 2 als von einem Gebietsfremden oder von mehreren wirtschaftlich verbundenen Gebietsfremden abhängig, wenn dem Gebietsfremden oder den wirtschaftlich verbundenen Gebietsfremden zusammen mehr als fünf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Stimmrechte an dem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 zuzurechnen sind.

(4) Ab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wenn die Bilanzsumme des gebietsansässigen Unternehmens, an dem der Gebietsfremde, die wirtschaftlich verbundenen Gebietsfremden oder ein anderes von dem Gebietsfremden oder von den wirtschaftlich verbundenen Gebietsfremden abhängiges gebietsansässiges Unternehmen beteiligt ist, oder das Betriebsvermögen der gebietsansässigen Zweigniederlassung oder Betriebsstätte des Gebietsfremden fünf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icht überschreitet. Absatz 1 findet ferner insoweit keine Anwendung, als dem Gebietsansässigen Unterlagen, die er zur Erfüllung seiner Meldepflicht benötigt, aus tatsächlichen oder rechtlichen Gründen nicht zugänglich sind. Absatz 1 Ziff. 1 und 2 findet keine Anwendung, wenn das gebietsansässige oder das abhängige gebietsansässige Unternehmen, an dem wirtschaftlich verbundene Gebietsfremde beteiligt sind, nicht erkennen kann, daß es sich bei den Gebietsfremden im Sinne des Absatzes 2 um wirtschaftlich verbundene Gebietsfremde handelt.

§ 63

Abgabe der Meldungen nach § 62

(1) Die Meldungen sind einmal jährlich nach dem Stand des Bilanzstichtages des Meldepflichtigen oder, soweit es sich bei dem Meldepflichtigen um eine nicht bilanzierende gebietsansässige Zweigniederlassung oder Betriebsstätte ein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handelt, nach dem Stand des Bilanzstichtages d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der Deutschen Bundesbank mit dem Vordruck „Vermögen Gebietsfremder im Wirtschaftsgebiet“ (Anlage K 4)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erstatten. Die Deutsche Bundesbank übersendet eine Ausfertigung der Meldungen dem Minister für Wirtschaft.

(2) Die Meldungen sind spätestens bis zum letzten Werktag des sechsten auf den Bilanzstichtag des Meldepflichtigen oder, soweit es sich bei dem Meldepflichtigen um eine nicht bilanzierende gebietsansässige Zweigniederlassung oder Betriebsstätte ein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handelt, des sechsten auf den Bilanzstichtag des gebietsfremden Unternehmens folgenden Monats bei der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abzugeben, in deren Bereich der Meldepflichtige ansässig ist.

(3) Meldepflichtig ist

1. in den Fällen des § 62 Abs. 1 Ziff. 1 das gebietsansässige Unternehmen,
2. in den Fällen des § 62 Abs. 1 Ziff. 2 das abhängige gebietsansässige Unternehmen,
3. in den Fällen des § 62 Abs. 1 Ziff. 3 die gebietsansässige Zweigniederlassung oder Betriebsstätte.

§ 64

Ausnahmen

Die Deutsche Bundesbank kann für einzelne Meldepflichtige oder für Gruppen von Meldepflichtigen vereinfachte Meldungen oder Abweichungen von Meldefristen oder Vordrucken zulassen oder einzelne Meldepflichtige oder Gruppen von Meldepflichtigen befristet oder widerruflich von einer Meldepflicht freistellen, soweit dafür besondere Gründe vorliegen oder der Zweck der Meldevorschriften nicht beeinträchtigt wird.

Kapitel VIII**Zahlungsverkehr**

Titel

Meldevorschriften nach § 30 GAW

1. Untertitel

Allgemeine Vorschriften

§ 65

Meldung von Zahlungen

(1) Gebietsansässige haben Zahlungen, die sie

1. von Gebietsfremden oder für deren Rechnung von Gebietsansässigen entgegennehmen (eingehende Zahlungen) oder
2. an Gebietsfremde oder für deren Rechnung an Gebietsansässige leisten (ausgehende Zahlungen),

zu melden.

(2) Ab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auf

1. Zahlungen, die den Betrag von zweitausend Deutsche Mark oder den Gegenwert in ausländischer Währung nicht übersteigen,
2. Ausfuhrerlöse,
3. Zahlungen, die die Gewährung, Aufnahme oder Rückzahlung von Krediten (einschließlich der Begründung und Rückzahlung von Guthaben bei Geldinstituten) mit einer ursprünglich vereinbarten Laufzeit oder Kündigungsfrist von nicht mehr als zwölf Monaten zum Gegenstand haben,

4. Zahlungen natürlicher Personen für den Bezug von Waren zum persönlichen Gebrauch und für die Inanspruchnahme von Dienstleistungen zu persönlichen Zwecken.

(3) Zahlung im Sinne dieses Kapitels ist auch die Aufrechnung und die Verrechnung. Als Zahlung gilt ferner das Einbringen von Sachen und Rechten in Unternehmen,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 66

Form der Meldung

(1) Ausgehende Zahlungen, die über ein gebietsansässiges Geldinstitut oder eine Postanstalt im Wirtschaftsgebiet geleistet werden, sind mit dem Vordruck „Zahlungsauftrag im Außenwirtschaftsverkehr“ (Anlage Z 1) zu melden.

(2) Eingehende und ausgehende Zahlungen außerhalb des Warenverkehrs, die durch Gebietsansässige, ausgenommen Geldinstitute, über ein Konto bei einem gebietsfremden Geldinstitut entgegengenommen oder geleistet werden, sind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melden, und zwar

1. eingehende Zahlungen mit dem Vordruck „Auslandskontenmeldung (Eingänge)“ (Anlage Z 2),
2. ausgehende Zahlungen mit dem Vordruck „Auslandskontenmeldung (Ausgänge)“ (Anlage Z 3).

(3) Eingehende und ausgehende Zahlungen, die nicht nach den Absätzen 1 und 2 gemeldet werden müssen, sind mit dem Vordruck „Zahl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Anlage Z 4)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melden. Für den Warenverkehr und für den übrigen Außenwirtschaftsverkehr sind getrennte Meldungen einzureichen.

(4) In den Meldungen sind die Kennzahlen des Leistungsverzeichnisses (Anlage LV) anzugeben.

(5) Bei abgabenbegünstigten Lieferungen und Leistungen an im Wirtschaftsgebiet stationierte ausländische Truppen sowie an das zivile Gefolge kann abweichend von Absatz 3 Satz 1 die Meldung auch durch Abgabe einer Durchschrift der Empfangsbestätigung der Truppen oder des zivilen Gefolges nach dem auf Grund der Abgabenvorschriften vorgeschriebenen Muster erstattet werden.

§ 67

Meldefrist

Die Meldungen sind abzugeben

1. bei Zahlungen nach § 66 Abs. 1
mit der Erteilung des Auftrages an das Geldinstitut oder die Postanstalt; der Auftraggeber kann die für die Deutsche Bundesbank bestimmte Ausfertigung des Zahlungsauftrages bei der Erteilung des Auftrages auch in verschlossenem Umschlag, auf dem sein Name und seine Anschrift als Absender angegeben sind, zur Weiterleitung an die Deutsche Bundesbank abgeben; in diesem Falle brauchen in der für das Geldinstitut oder die Postanstalt bestimmten Ausfertigung die statistischen Angaben und in der für die Deutsche Bundesbank bestimmten Ausfertigung die zahlungsverkehrstechnischen Angaben nicht ausgefüllt zu werden;
2. bei Zahlungen nach § 66 Abs. 2
 - a) von Kontoinhabern, die im Handels- oder Genossenschaftsregister eingetragen sind, monatlich bis zum siebenten Tage des auf die Leistung oder Entgegennahme der Zahlungen folgenden Monats, wenn der Gesamtbetrag der nach § 65 Abs. 1 zu meldenden Zahlungen im Kalendermonat zwanzigtausend Deutsche Mark übersteigt,
 - b) in den übrigen Fällen halbjährlich bis zum zehnten Tage des auf den Ablauf des Kalenderhalbjahres folgenden Monats;
3. bei Zahlungen nach § 66 Abs. 3
bis zum siebenten Tage des auf die Leistung oder Entgegennahme der Zahlungen folgenden Monats; Sammelmeldungen sind zulässig.

§ 68

Meldungen 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1) Gebietsansässige, ausgenommen Geldinstitute, haben ihre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Gebietsfremden zu melden, wenn diese Forderungen oder Verbindlichkeiten bei Ablauf eines Monats jeweils zusammengerechnet mehr als fünfhunderttausend Deutsche Mark betragen.

(2) Die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jeweils monatlich bis zum zehnten Tage des folgenden Monats nach dem Stand des letzten Werktages des Vormonats mit dem Vordruck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Finanzbeziehungen mit Gebietsfremden“ (Anlage Z 5 Bl. 1 und Bl. 2)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melden, sofern nicht Absatz 3 etwas anderes vorschreibt.

(3)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dem Waren- und Dienstleistungsverkehr mit Gebietsfremden einschließlich der geleisteten und entgegengenommenen Anzahlungen sind jeweils monatlich bis zum zwanzigsten Tage des folgenden Monats nach dem Stand des letzten Werktages des Vormonats mit dem Vordruck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Gebietsfremden aus dem Waren- und Dienstleistungsverkehr“ (Anlage Z 5 a) in doppelter Ausfertigung zu melden.

(4) Entfällt für einen Gebietsansässigen, der für einen vorangegangenen Meldestichtag meldepflichtig war, wegen Unterschreitens der in Absatz 1 genannten Betragsgrenze die Meldepflicht, so hat er dies bis zum zwanzigsten Tage des darauf folgenden Monats der Meldestelle schriftlich anzuzeigen.

§ 69

Meldestellen

(1) Die nach den §§ 65 und 68 vorgeschriebenen Meldungen sind der Deutschen Bundesbank zu erstatten. Sie sind bei der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abzugeben, in deren Bereich der Meldepflichtige ansässig ist.

(2) In den Fällen des § 66 Abs. 1 ist die Meldung bei dem beauftragten Geldinstitut und der beauftragten Postanstalt zur Weiterleitung an die Deutsche Bundesbank abzugeben.

§ 70

Ausnahmen

§ 64 gilt entsprechend.

2. Untertitel

Ergänzende Meldevorschriften

§ 71

Zahlungen im Transithandel

(1) Für Zahlungen im Transithandel gelten die §§ 65 bis 67, 69 und 70. Ist die Ware bei Abgabe der Meldung bereits an einen Gebietsfremden weiter veräußert, so ist der Zahlungseingang zusammen mit dem Zahlungsausgang zu melden. Ist die Zahlung des gebietsfremden Erwerbers im Zeitpunkt des Zahlungsausgangs noch nicht eingegangen, so ist der vereinbarte Betrag der Zahlung zu melden.

(2) Wer eine ausgehende Zahlung im Transithandel gemeldet hat und die Transithandelsware danach einfuhrrechtlich abfertigen läßt, hat dies formlos bis zum zehnten Tage des auf die Einfuhrabfertigung folgenden Monats unter Angabe des gemeldeten Betrages und des Zeitpunktes der Zahlung mit dem Zusatz „Umstellung von Transithandel auf Wareneinfuhr“ zu melden.

(3) Wer eine ausgehende Zahlung für eine Wareneinfuhr gemeldet hat und die Ware danach an einen Gebietsfremden veräußert, ohne daß diese einfuhrrechtlich abgefertigt worden ist, hat dies formlos bis zum zehnten Tage des auf die Veräußerung folgenden Monats unter Angabe des gemeldeten Betrages mit dem Zusatz „Umstellung von Wareneinfuhr auf Transithandel“ zu melden.

(4) In den Fällen der Absätze 2 und 3 sind ferner die Benennung der Ware, die Nummer des Warenverzeichnisses für die Außenhandelsstatistik, das Einkaufsland und die Währung, in der die Zahlung geleistet worden ist, anzugeben.

(5) Die Meldungen sind der Deutschen Bundesbank zu erstatten. Sie sind bei der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abzugeben, in deren Bereich der Meldepflichtige ansässig ist.

§ 72

Zahlungen der Seeschiffahrtsunternehmen

Gebietsansässige, die ein Seeschiffahrtsunternehmen betreiben, haben abweichend von den §§ 65 bis 67 Zahlungen, die sie im Zusammenhang mit dem Betriebe der Seeschiffahrt entgegennehmen oder leisten, mit dem Vordruck „Einnahmen und Ausgaben der Seeschiffahrt“ (Anlage Z 8) monatlich bis zum siebenten Tage des auf die Zahlung folgenden Monats der zuständigen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in dreifacher Ausfertigung zu melden. Die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übersendet eine Ausfertigung dem Minister für Verkehr.

3. Untertitel

Meldevorschriften für Geldinstitute

§ 73

Meldungen der Geldinstitute

(1) Soweit Zahlungen nach Absatz 2 zu melden sind, finden die §§ 65 bis 69 keine Anwendung.

(2) Gebietsansässige Geldinstitute haben zu melden

1. eingehende und ausgehende Zahlungen für die Veräußerung oder den Erwerb von Wertpapieren, die das Geldinstitut für eigene oder fremde Rechnung an Gebietsfremde verkauft oder von Gebietsfremden kauft, sowie ausgehende Zahlungen, die das Geldinstitut im Zusammenhang mit der Einlösung inländischer Wertpapiere leistet, mit dem Vordruck „Wertpapiergeschäfte im Außenwirtschaftsverkehr“ (Anlage Z 10) in doppelter Ausfertigung; statt dieses Vordrucks kann eine Durchschrift der Wertpapierabrechnung des Geldinstituts eingereicht werden, wenn sie die im Vordruck vorgesehenen Angaben enthält;
2. Zins- und Dividendenzahlungen an Gebietsfremde auf inländische Wertpapiere, die sie im Auftrag eines Gebietsfremden einziehen, mit dem Vordruck „Wertpapier-Erträge im Außenwirtschaftsverkehr“ (Anlage Z 11);
3. eingehende und ausgehende Zahlungen für Zinsen und zinsähnliche Erträge und Aufwendungen (ausgenommen Wertpapierzinsen), die sie für eigene Rechnung von Gebietsfremden entgegennehmen oder an Gebietsfremde leisten, mit den Vordrucken „Zinseinnahmen und zinsähnliche Erträge im Außenwirtschaftsverkehr (ohne Wertpapierzinsen)“ (Anlage Z 14) und „Zinsausgaben und zinsähnliche Aufwend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ohne Wertpapierzinsen)“ (Anlage Z 15);
4. im Zusammenhang mit dem Reiseverkehr und der Personenbeförderung
 - a) eingehende Zahlungen einschließlich des Gegenwertes der in fremde Währungsgebiete versandten auf Deutsche Mark lautenden Noten und Münzen mit dem Vordruck „Zahlungseingänge im aktiven Reiseverkehr“ (Anlage Z 12);
 - b) ausgehende Zahlungen einschließlich des Gegenwertes der aus fremden Währungsgebieten eingegangenen auf Deutsche Mark lautenden Noten und Münzen mit dem Vordruck „Zahlungsausgänge im passiven Reiseverkehr“ (Anlage Z 13).

(3) Absatz 2 Ziff. 1 und 3 findet keine Anwendung auf Zahlungen, die den Betrag von zweitausend Deutsche Mark oder den Gegenwert in ausländischer Währung nicht übersteigen.

(4) Bei Meldungen nach Absatz 2 Ziff. 1 sind die Kennzahlen des Leistungsverzeichnisses (Anlage LV) anzugeben.

(5) Es sind zu erstatten

1. Meldungen nach Absatz 2 Ziff. 1, 2 und 4 monatlich bis zum fünften Tage des auf den meldepflichtigen Vorgang folgenden Monats,
2. Meldungen nach Absatz 2 Ziff. 3 monatlich bis zum siebenten Tage des auf den meldepflichtigen Vorgang folgenden Monats. Zinsen und zinsähnliche Erträge und Aufwendungen im Kontokorrent- und Sparverkehr, einschließlich Zinsen auf Sparbriefe und Namens-Sparschuldverschreibungen, brauchen nur halbjährlich bis zum dreißigsten Tage nach Ablauf eines Kalenderhalbjahres gemeldet zu werden.

(6) Die Meldungen sind der Deutschen Bundesbank zu erstatten. Sie sind bei der Filiale der Deutschen Bundesbank abzugeben, in deren Bereich der Meldepflichtige ansässig ist.

Kapitel IX

Ordnungsstrafbestimmungen

§ 74

Ordnungswidrigkeiten

(1) Ordnungswidrig im Sinne des § 38 Abs. 1 und 6 des GAW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1. entgegen § 6 Abs. 1 Satz 1 oder 2 oder § 7 Abs. 1 ohne Genehmigung Waren oder Unterlagen ausführt,
2. entgegen § 8 Waren oder Unterlagen ausführt,
3. entgegen § 41 Abs. 1 Satz 1 ohne Genehmigung Waren im Rahmen eines Transithandelsgeschäftes veräußert,
4. entgegen § 44 Abs. 1 ohne Genehmigung Seeschiffe verchartert,
5. entgegen § 47 Abs. 1 ohne Genehmigung Waren in Schiffe oder Luftfahrzeuge von Gebietsfremden einbaut,
6. entgegen § 47 Abs. 2 ohne Genehmigung nicht allgemein zugängliche Kenntnisse weitergibt,
7. entgegen § 47 Abs. 3 ohne Genehmigung Lizenzen erteilt oder nicht allgemein zugängliche Kenntnisse weitergibt,
8. entgegen § 48 Verträge abschließt, erfüllt oder Geschäfte besorgt oder
9. ~~entgegen § 39 Abs. 1 bis 3 Waren oder Unterlagen durchführt.~~

(2) Ordnungswidrig im Sinne des § 38 Abs. 3 Ziff. 1 des GAW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1. entgegen § 44 Abs. 2 ohne Genehmigung beim Abschluß von Frachtverträgen mitwirkt,
2. entgegen § 45 ohne Genehmigung Verträge abschließt, erfüllt oder Geschäfte besorgt,
3. entgegen § 49 Frachtverträge abschließt oder Seeschiffe chartert oder
4. entgegen § 50 Abs. 1 oder § 51 Abs. 1 ohne Genehmigung dort bezeichnete Rechtsgeschäfte vornimmt.

(3) Ordnungswidrig im Sinne des § 38 Abs. 3 Ziff. 2, Abs. 6 des GAW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1. entgegen §§ 9 oder 23 Abs. 1 Satz 1 ohne Genehmigung Waren ausführt,
2. entgegen § 39 Abs. 4 ohne Genehmigung die dort bezeichneten Waren durchführt oder
3. entgegen § 55 Abs. 1 Zahlungen oder sonstige Leistungen bewirkt.

(4) Ordnungswidrig im Sinne des § 38 Abs. 4 Ziff. 2 des GAW handelt, wer

1. entgegen § 3 einen Genehmigungsbescheid der Genehmigungsstelle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zurückgibt oder entgegen § 4 einen Genehmigungsbescheid nicht oder nicht für die vorgeschriebene Dauer aufbewahrt,
2. als Ausführer entgegen § 11 Abs. 1 Satz 1 eine Ausfuhrsendung der Versand- oder der Ausgangszollstelle nicht oder nicht in der vorgeschriebenen Weise stellt,
3. als Ausführer
 - a) entgegen § 11 Abs. 1 Ziff. 2, § 13 Abs. 3 Satz 1, § 14 Abs. 2 Satz 1 oder § 16 Abs. 2 Satz 1 eine Ausfuhrerklärung nicht,

nicht rechtzeitig oder mit nicht richtigem oder nicht vollständigem Inhalt abgibt oder

- b) entgegen § 14 Abs. 1 eine Versand-Ausfuhrerklärung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4. als Ausführer, Versender oder Dritter entgegen § 13 Abs. 4, auch in Verbindung mit § 15 Abs. 1 Satz 2 oder Abs. 3 Satz 2, eine Ausfuhrsendung von dem angegebenen Ort entfernt;
5. als Versender entgegen § 15 Abs. 1 Satz 1 eine Versand-Ausfuhrerklärung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oder entgegen § 15 Abs. 3 Satz 3 eine weitere Versand-Ausfuhrerklärung nicht, nicht richtig, nicht vollständig oder nicht rechtzeitig abgibt,
6. als Dritter entgegen § 15 Abs. 3 Satz 2 eine Versand-Ausfuhrerklärung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7. als Zulieferer entgegen § 16 Abs. 1 Satz 2 eine Versand-Ausfuhrerklärung nicht,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8. als Vertreter des Ausführers entgegen § 18 Abs. 3 eine Ausfuhrerklärung mit nicht richtigem oder nicht vollständigem Inhalt oder eine Versand-Ausfuhrerklärung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9. als Ausführer entgegen § 20 Abs. 2 die Ausfuhrerlaubnis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vorlegt,
10. als Ausführer oder Versender entgegen § 21 Abs. 2 Satz 2 die vorgeschriebene schriftliche Erklärung nicht,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11. als Ausführer oder Versender entgegen § 22 Abs. 2 Satz 1 oder 3 eine Ausfuhrkontrollmeldung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abgibt,
12. als Einführer entgegen § 26 Abs. 2 Ziff. 2, auch in Verbindung mit § 31 Abs. 1, ein Ursprungszeugnis oder eine Ursprungserklärung nicht, nicht rechtzeitig oder mit nicht richtigem oder nicht vollständigem Inhalt vorlegt,
13. als Einführer oder Transithändler
- a) entgegen § 29 Abs. 2, auch in Verbindung mit § 43 Satz 2, Angaben nicht,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macht oder
- b) entgegen § 29 Abs. 3, auch in Verbindung mit § 43 Satz 2, eine Einfuhr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nachweist, eine Anzeige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erstattet, eine Bescheinigung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zurückgibt, eine Mitteilung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macht oder eine neue Bescheinigung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erwirkt,
14. als Einführer entgegen § 31 Abs. 1 die Einfuhrerlaubnis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vorlegt oder
15. entgegen §§ 52, 53, 54, 56 bis 69 oder 71 bis 73 eine Meldung nicht, nicht richtig, nicht vollständig oder nicht rechtzeitig erstattet.

(5)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bestimmt sich nach den Absätzen 7 und 8 des § 38 des Gesetzes über den Außenwirtschafts-, Kapital- und Zahlungsverkehr.

Kapitel X

Übergangs- und Schlußbestimmungen

§ 75

Beschwerde, gerichtliche Nachprüfung

(1) Gegen die Versagung beantragter Genehmigungen ist das Rechtsmittel der Beschwerde innerhalb einer Frist von zwei Wochen nach Zugang der Entscheidung zulässig. Die Beschwerde ist bei der Genehmigungsstelle schriftlich unter Angabe der Gründe einzureichen. Wird der Beschwerde nicht abgeholfen, ist sie innerhalb zweier Wochen nach ihrem Eingang der vorgesetzten Behörde zur Entscheidung vorzulegen.

(2) Gegen Entscheidungen über die Ablehnung von Genehmigungen oder über den Widerruf von Genehmigungen kann nach Ablehnung der Beschwerde Antrag auf Nachprüfung durch das Gericht gestellt werden.

(3) Für die Durchführung des Verfahrens ist das Kreisgericht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ie Genehmigungsstelle ihren Sitz hat.

(4) Für das Verfahren gelten die Bestimmungen des Gesetzes vom 14. Dezember 1988 über die Zuständigkeit und das Verfahren der Gerichte zur Nachprüfung von Verwaltungsentscheidungen (GBl. I Nr. 28 S. 327).

§ 76

Gültigkeit von Abfertigungsgenehmigungen

(1) Für den Zeitraum von sechs Monaten nach Inkrafttreten dieser Verordnung gelten die von den Binnenzollämtern erteilten Genehmigungen zur Abfertigung ohne Mitwirkung des Binnenzollamtes gemäß § 11 der Sechzehnten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Zollgesetz vom 20. Oktober 1970 — Ausfuhrverfahren für Handelswaren — (GBl. II Nr. 88 S. 616) — als Zulassung im Sinne des § 18 dieser Verordnung.

(2) Erlischt die Gültigkeit der in Absatz 1 genannten Genehmigung bereits vor Ablauf der sechs Monate, gilt diese verkürzte Frist.

§ 77

Übergangsbestimmungen für die Meldevorschriften nach § 30 GAW

(1) Auf die Abgabe der Meldungen gemäß §§ 57, 59, 61, 63 sowie § 66 Abs. 2 wird bis auf weiteres verzichtet. Die in § 66 Abs. 2 erwähnten Zahlungen sind stattdessen mit dem Vordruck „Zahlungen im Außenwirtschaftsverkehr“ (§ 66 Abs. 3) zu melden.

(2) Die als Anlage²⁾ vorgesehenen Meldevordrucke treten am 1. November 1990 in Kraft. Bis dahin können die in der Anlage zur Außenwirtschaftsver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geführten Vordrucke gleicher Bezeichnung verwendet werden.

(3) Meldungen über Zahlungen, die über zwischenstaatliche Clearing-(Verrechnungs-)Konten abgewickelt werden, sowie üb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Transaktionen im Rahmen von zwischenstaatlichen Zahlungsabkommen sind der Deutschen Bundesbank abweichend von den Bestimmungen in den §§ 65 ff. von den Institutionen zu erstatten, die mit der Führung dieser Verrechnungskonten beauftragt sind.

§ 78

Inkrafttreten

Diese Verordnung tritt am 1. Juli 1990 in Kraft.

Berlin, den 28. Juni 1990

**Der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 Maizière
Ministerpräsident

Dr. Pohl
Minister für Wirtschaft

²⁾ Die Veröffentlichung der in der Verordnung genannten Anlagen erfolgt im Sonderdruck des Gesetzblattes.

Verordnung

über die Berechnung von Steuern und Beiträgen zur Sozialversicherung sowie über die Entrichtung von Abschlagzahlungen

— Selbstberechnungsverordnung —

vom 27. Juni 1990

§ 1

Selbstberechnung

(1) Unternehmen, Genossenschaften, Gewerbetreibende, freiberuflich und sonstig selbständig Tätige sowie andere Personen (nachfolgend als Steuerpflichtige bezeichnet), die zur Zahlung von

문서 번호 41

동독 화폐통합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부, 동독 중앙은행,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

이 문서는 경제화폐통합 직전에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경제화폐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정부 재무부에 한시적으로 „화폐전환 감사국“을 설치한다. 이 기구는 화폐전환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여부를 검토한다. 동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누가 십만 마르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개인구좌에 보유하고 있는지 1990년 7월 6일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사국은 나아가 동독의 법인체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개설한 구좌 중에 보유금액이 이십 오만 마르크를 초과한 구좌를 검토한다. 금융기관의 정보를 검토 정리하는 작업을 서비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감사국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포착하는 경우 해당 형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물을 제출한다. 모든 금융기관은 동독의 법인체 중에서 1990년 6월 30일 현재 보유금액이 이십 오만 동독마르크 이상이며, 1989년 12월 31일과 1990년 6월 30일 사이에 보유금액이 이십만 동독 마르크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필히 감사국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동독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화폐전환신청을 제출한 경우 1990년 6월 30일에 보유금액이 오만 동독 마르크를 초과하고, 1989년 12월 31일과 1990년 6월 30일 사이에 삼만 동독 마르크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감사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한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 상 알게 되는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감사업무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동독 정부 재무부에서 보상해 준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1-502, Ausgabetag 04.07.1990

**Gesetz
über die Aufhebung der Versorgungsordnung
des ehemaligen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

vom 29. Juni 1990

§ 1

Allgemeine Bestimmung

Die Versorgungsordnung des ehemaligen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 (nachfolgend Versorgungsordnung genannt) wird mit Wirkung vom 30. Juni 1990 aufgehoben. Die bestehenden Versorgungen werden entsprechend den nachfolgenden Festlegungen in die Rentenversicherung überführt.

§ 2

Kürzung der Versorgungen

Ab 1. Juli 1990 werden mit dem Ziel der Anpassung an das Niveau im zivilen Bereich die nach der Versorgungsordnung festgesetzten Renten vorläufig in folgender Höhe gezahlt:

- a) Die Alters- und Invalidenrenten werden um 50 % des 495 DM übersteigenden Betrages gekürzt, dürfen jedoch die Höhe von 990 DM nicht überschreiten.
- b) Die Hinterbliebenenrenten werden von den nach Buchstabe a gekürzten Alters- oder Invalidenrenten abgeleitet. Sie betragen mindestens

für Witwen/Witwer	404 DM
für Vollwaisen	269 DM
für Halbwaisen	202 DM.
- c) Die Übergangsrenten werden von der nach Buchstabe a gekürzten Invalidenrente abgeleitet und in dieser Höhe bis zum 31. Dezember 1990 weitergezahlt.
- d) Die Dienstbeschädigungsvollrenten werden um 50 % des 495 DM übersteigenden Betrages gekürzt. Dienstbeschädigungsteilrenten werden von der gekürzten Dienstbeschädigungsvollrente abgeleitet.

§ 3

Überführung in die Rentenversicherung

(1) Die Überführung in die Rentenversicherung erfolgt mit Wirkung vom 1. Januar 1991. Für die Neufestsetzung der Renten der Sozialversicherung gelten folgende Grundsätze:

1. Die Renten der Sozialpflichtversicherung werden nach den Bestimmungen der Rentenverordnung wie für alle anderen Arbeitnehmer festgesetzt.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2. Für die entsprechend der Versorgungsordnung geleisteten Beiträge über 60 M monatlich ab 1. März 1971 wird eine Zusatzrente nach den Bestimmungen der FZR-Verordnung festgelegt.

(2) Die gemäß Abs. 1 festgesetzten Renten werden nach den gleichen Grundsätzen angeglichen, wie die Renten der Sozialpflichtversicherung und die Renten der freiwilligen Zusatzrentenversicherung, die bereits vor dem 1. Juli 1990 bestanden haben.

(3) Übersteigt der Gesamtbetrag der nach den Absätzen 1 und 2 errechneten Renten 990 DM monatlich, ist die Zusatzrente um den übersteigenden Betrag zu mindern.

(4) Die nach den Absätzen 1 bis 3 festgesetzten Renten unterliegen künftigen Rentenanpassungen.

Beseitigung ungerechtfertigter Leistungen

§ 4

Zusätzliche Versorgungen an erwerbsfähige Witwen und Witwer werden mit Wirkung vom 30. September 1990 eingestellt, sofern sie bereits zwei Jahre und länger gezahlt wurden. Erfolgte noch keine Zahlung für zwei Jahre, werden sie ab 1. Oktober 1990 entsprechend den Bestimmungen der Sozialversicherung bis zum Ablauf dieser Frist in Höhe von 270 DM gezahlt.

§ 5

(1) Ansprüche aus der Versorgungsordnung können gekürzt oder aberkannt werden, wenn der Berechtigte in schwerwiegendem Maße seine Stellung zum eigenen Vorteil oder zum Nachteil anderer mißbraucht hat. Durch eine Kürzung darf die gesetzlich festgelegte Mindestrente nicht unterschritten werden.

(2) Über die Kürzung oder Aberkennung entscheidet auf Vorschlag der Regierungskommission zur Auflösung des Amtes für Nationale Sicherheit der Minister des Innern.

(3) Die nach dem 1. Oktober 1989 erfolgten Invalidisierungen sind durch Gutachterkommissionen unter direkter Verantwortung der Bezirksgutachter nachzubegutachten. Bei nichtvorliegender Invalidität sind die Zahlungen einzustellen.

§ 6

Schlußbestimmung

Dieses Gesetz tritt am 1. Juli 1990 in Kraft.

Gesetz

**zur Feststellung von rechtswidrigen Handlungen
mit Wirkung auf die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vom 29. Juni 1990

§ 1

Bei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rd eine zeitweilige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gebildet. Aufgabe der Behörde ist es, im Zusammen-

hang mit der Währungsumstellung zu prüfen, ob Anhaltspunkte dafür vorliegen, daß Antragsteller rechtswidrige Handlungen mit Wirkung auf umzustellende Guthaben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utsche Mark begangen haben.

§ 2

Zur Vorbereitung der Prüfung nach § 1 ist jedes Geldinstitut verpflichtet, bei natürlichen oder juristischen Personen oder Stellen mit Wohnsitz,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eststellungen nach Maßgabe der Bestimmungen dieses Gesetzes zu treffen.

§ 3

(1) 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Staatsbank Berlin veranlaßt, daß unverzüglich die Kontoinhaber — natürliche Personen mit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deren Guthaben je Konto bis zum 6. Juli 1990 10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mehr betragen, festgestellt werden. Sie übergibt ihre Feststellungen der Prüfbehörde.

(2) Im Rahmen einer Stichprobe stellen die Geldinstitute für ausgewählte Konten, die von der Prüfbehörde bestimmt werden, die Veränderungen des Kontoguthabens zwischen dem obengenannten Termin und dem Termin der Jahresinventur 1989 im Zeitraum vom September 1989 bei Buchspargirokonten bzw. der Monatsinventur Oktober 1989 bei Spargirokonten fest. Sofern sich das Kontoguthaben um 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der mehr erhöht hat, informieren die Geldinstitute die Prüfbehörde.

(3) Die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Staatsbank Berlin veranlaßt, daß die Geldinstitute diejenigen natürlichen Personen mit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eststellen, deren Gesamtguthaben bis zum 6. Juli 1990 10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der mehr betragen. Die Ergebnisse sind der Prüfbehörde zu übermitteln.

Die Geldinstitute stellen fest, bei welchen Personen sich das Gesamtguthaben zwischen dem 30. 6. 1990 und dem Termin der Jahresinventur 1989 vom September 1989 bei Buchspargirokonten bzw. der Monatsinventur Oktober 1989 bei Spargirokonten um 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der mehr erhöht hat. Sofern eine solche Erhöhung vorliegt, teilen sie die einschlägigen Daten unverzüglich der Prüfbehörde mit.

(4) Die Prüfbehörde stellt durch Einsichtnahme in Kontounterlagen der Geldinstitute juristische Personen oder Stellen mit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est, die Konten nach dem 1. 1. 1990 neu eingerichtet haben, wenn das darauf befindliche Guthaben 2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schreitet.

~~(5) Für die Feststellungen nach Absatz 1 bis Absatz 3 können sich die Geldinstitute eines Dienstleistungsunternehmens im Wege der Datenverarbeitung im Auftrag bedienen.~~

(6) Die zur Vorbereitung der Prüfung nach § 1 gewonnenen Daten der Konteninhaber, die nicht an die Prüfbehörde mitzutellen sind, sind unverzüglich, die Daten der übrigen Konteninhaber spätestens nach Übermittlung an die Prüfbehörde zu löschen bzw. zu vernichten. Eine Weitergabe von Daten an unbefugte Dritte ist unzulässig.

§ 4

(1) Die Prüfbehörde ist verpflichtet, unverzüglich die erforderlichen Prüfungen vorzunehmen. Hierzu kann sie Einsicht in Kontounterlagen nehmen, Geldinstitute und Behörden um Auskunft ersuchen sowie den Kontoinhaber zu seinem Guthaben befragen. Im Falle des Erfordernisses ist sie befugt, das Geldinstitut anzuweisen, über die den Grenzwert nach § 3 Absatz 1 bis 3 überschreitenden Guthaben (Kontostand September/Oktober 1989) sowie Guthaben gemäß § 3 Absatz 4 für den Zeitraum der Prüfung, jedoch höchstens bis zu 4 Wochen, nicht verfügen zu lassen. Schließen die Prüfungen den Verdacht einer Straftat nicht aus, hat sie Anzeige bei der zuständigen Strafverfolgungsbehörde zu erstatten und die Beweismittel zu übergeben.

(2) Tatsachen oder Beweismittel, die allein steuerrechtliche Pflichten vor dem 1. Juli 1990 offenlegen, dürfen für ein Besteuerungsverfahren oder für die Verfolgung einer Straftat nur offenbart werden, sofern Anzeige nach Absatz 1 wegen einer anderen Straftat erstattet wird.

(3) Ist Anzeige nach Absatz 1 erstattet worden, hat die Prüfbehörde die Daten zu löschen bzw. zu vernichten. Ergibt eine Einzelfallprüfung, daß keine Anhaltspunkte für den Verdacht einer Straftat und keine Ansätze für weitere Prüfungen vorhanden sind, hat die Prüfbehörde die Daten unverzüglich zu löschen bzw. zu vernichten. Eine Weitergabe von Daten an unbefugte Dritte ist unzulässig.

§ 5

(1) Zur Vorbereitung der Prüfung nach § 1 ist jedes Geldinstitut verpflichtet, der Prüfbehörde Einsicht zu gewähren in die

1. Umstellungsanträge juristischer Personen mit Sitz oder Niederlassung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nn das Guthaben per 30. 6. 1990 2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der mehr beträgt, sofern sich das Guthaben zwischen dem 31. 12. 1989 und dem 30. 6. 1990 um 20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der mehr erhöht hat,

2. Umstellungsanträge natürlicher Personen mit Wohnsitz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nn das Guthaben per 30. 6. 1990 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schreitet, sofern sich das Guthaben zwischen dem 31. 12. 1989 und dem 30. 6. 1990 um 3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der mehr erhöht hat.

Die Geldinstitute informieren die Prüfbehörde unverzüglich über die Anzahl der vorliegenden Umstellungsanträge, für die die obengenannten Kriterien zutreffen.

(2) § 4 gilt entsprechend.

§ 6

(1) Die Prüfbehörde wird unabhängig von Mitteilungen nach § 3 Absätze 1 bis 4 und § 5 Absatz 1 im Rahmen ihrer Aufgabe nach § 1 zur Durchführung der erforderlichen Prüfungen verpflichtet, wenn sie auf andere Weise Kenntnis von prüfungserheblichen Umständen erhält.

(2) § 4 gilt entsprechend.

§ 7

(1) Die an dem Prüfverfahren Beteiligten sind zur Geheimhaltung der ihnen bei ihrer Tätigkeit bekanntgewordenen personenbezogenen Daten verpflichtet. Sie dürfen diese Daten nur zu dem in § 1 genannten Zweck verwenden.

(2) Auf die Verwendung personenbezogener Daten im Rahmen dieses Prüfverfahrens finden die in Anlage VII des Vertrages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edergelegten Datenschutzgrundsätze Anwendung.

§ 8

Die den Geldinstituten im Zusammenhang mit der Durchführung dieser Aufgaben entstandenen Aufwendungen sind zu ermitteln und vom Ministerium der Finanzen zu erstatten.

§ 9

Dieses Gesetz tritt am 29. Juni 1990 in Kraft.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문서 번호 42

전환예금액 획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1990 년 6 월 29 일

담당자 / 기관: Volkskammer der DDR, Präsidium der Volkskammer der DDR

내용:

이 문서는 화폐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독최고인민회의가 도입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폐전환의 실시에 있어서 신고된 보유예금액의 합법적 취득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최고인민회의 의원 21 명으로 구성된 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가 화폐전환을 위해 신고된 보유금액의 합법적 취득여부에 의심을 제기할 경우 10 일 이내에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1990 년 7 월 8 일까지 그와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고 1990 년 10 월 1 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 주 내에 항의서를 제출하여 결정사항의 실행을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항의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2 주 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위원회에서 그 항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이 2 주 내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38, S. 503, Ausgabetag 04.07.1990

**Gesetz
über den Nachweis der Rechtmäßigkeit des Erwerbs
von Umstellungsguthaben
vom 29. Juni 1990**

§ 1

Zur Entscheidung über die Realisierung der Umstellung von Guthaben kann die Prüfung des rechtmäßigen Erwerbs im nachfolgend geregelten Verfahren angeordnet werden. Dazu wird mit sofortiger Wirkung ein aus 21 Abgeordneten der Volkskammer bestehender zeitweiliger Sonderausschuß gebildet.

§ 2

Natürliche Personen und juristische Personen mit Wohnsitz oder Sitz der Niederlassung in der DDR oder außerhalb der DDR haben auf Verlangen die Rechtmäßigkeit des Erwerbs des zur Umstellung angemeldeten Guthabens (nachfolgend Gesamtguthaben) nachzuweisen.

§ 3

(1) Das Verlangen gemäß § 2 kann durch den zeitweiligen Sonderausschuß gestellt werden, wenn Zweifel an dem rechtmäßigen Erwerb des Gesamtguthabens bestehen.

(2) Ein solches Verlangen ist bis zum 8. Juli 1990 zu stellen und dem Kontoinhaber unverzüglich zu übermitteln.

(3) In den Fällen, in denen ein solches Verlangen gestellt wurde, ist durch den zeitweiligen Sonderausschuß dem kontoführenden Geldinstitut mitzuteilen, daß bis zu einer endgültigen Entscheidung der den bevorzugten Umtausch übersteigende Betrag zu sperren und damit eine Verfügung über diesen Betrag auszuschließen ist.

§ 4

(1) Der Kontoinhaber ist verpflichtet, innerhalb einer Frist von 10 Tagen nach Zugang des Verlangens die Rechtmäßigkeit des Erwerbs des Gesamtguthabens nachzuweisen.

(2) Die Unterlagen sind bei dem zeitweiligen Sonderausschuß einzureichen.

§ 5

(1) Durch den zeitweiligen Sonderausschuß ist anhand der eingereichten Unterlagen zu prüfen, ob der Erwerb des Gesamtguthabens rechtmäßig erfolgte.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2) Rechtmäßigkeit des Erwerbs liegt insbesondere dann nicht vor, wenn das Gesamtguthaben oder Teile davon durch

- strafbbares oder ordnungswidriges Handeln,
- Handlungen, die einen gröblichen Verstoß gegen die guten Sitten darstellen,
- einen Mißbrauch staatlicher oder gesellschaftlicher Befugnisse oder einer staatlichen oder gesellschaftlichen Stellung oder Tätigkeit zum Nachteil des Gemeinwohls

erlangt wurde.

(3) Die Entscheidung über die Feststellung eines unrechtmäßigen Erwerbs gemäß Absatz 2 ist dem Kontoinhaber und dem kontoführenden Kreditinstitut spätestens bis zum 1. Oktober 1990 mitzuteilen, sofern nicht ein Fall nach Absatz 4 vorliegt.

(4) Soweit sich der Verdacht einer Straftat ergibt, ist Anzeige bei der zuständigen Strafverfolgungsbehörde zu stellen. Die Entscheidung des zeitweiligen Sonderausschusses darf in diesem Fall erst nach der rechtskräftigen Entscheidung der Strafverfolgungsbehörde getroffen werden.

(5) Die Entscheidung des zeitweiligen Sonderausschusses über den unrechtmäßigen Erwerb des Gesamtguthabens oder Teilen davon hat zur Folge, daß das nicht rechtmäßig erworbene Guthaben zugunsten des Staates eingezogen wird.

(6) Die Einziehung ist dem Kontoinhaber durch schriftlichen Bescheid des kontoführenden Kreditinstituts mitzuteilen.

§ 6

(1) Gegen die Entscheidung des zeitweiligen Sonderausschusses hat der Betroffene das Recht der Beschwerde. Sie ist innerhalb von 2 Wochen schriftlich und begründet bei dem zeitweiligen Sonderausschuß einzulegen. Die Beschwerde hat aufschiebende Wirkung.

(2) Über die Beschwerde ist innerhalb von 2 Wochen nach ihrem Eingang zu entscheiden.

(3) Wird der Beschwerde durch den zeitweiligen Sonderausschuß nicht stattgegeben, ist sie dem Präsidium der Volkskammer zur endgültigen Entscheidung unverzüglich zuzuleiten. Das Präsidium der Volkskammer entscheidet innerhalb von 4 Wochen.

§ 7

Dieses Gesetz tritt am 29. Juni 1990 in Kraft.

**Gesetz
zur Änderung des Gewerbegesetz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6. März 1990
vom 29. Juni 1990**

Die Volkskammer beschließt folgende Änderung des Gewerbegesetz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6. März 1990 (GBl. I Nr. 17 S. 138):

§ 1

Der § 1 Abs. 1 des Gewerbegesetzes erhält folgende Fassung: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1) Die Ausübung eines Gewerbes ist jedermann gestattet, soweit nicht dieses Gesetz, andere Gesetze oder Rechtsvorschriften Beschränkungen festlegen.“

§ 2

Im § 6 des Gewerbegesetzes wird der letzte Satz „Der § 10 des Vertragsgesetzes vom 25. März 1982 (GBl. I Nr. 14 S. 293)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gestrichen.

§ 3

Dieses Gesetz tritt mit sein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문서 번호 43

베를린 국립은행법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 동독인민회의

내용:

이 문서는 동독의 중앙은행의 후속기관으로 설립된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법이다. 이 은행의 지주는 동독 국가이다. 동독 국가는 이 은행의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이 은행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이 법을 통해 은행 대출의 인수자와 인수시기가 규정되었다. 이 은행은 특히 화폐경제공동체의 도입 이후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안정 문제, 신탁청을 포함한 법인체와 공공기관의 은행거래문제, 공공사업의 재정과 동독의 경제 인프라 주택 환경 역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지원사업의 재정 조달 그리고 국제 무역과 금융거래, 국제금융기구 참여, 은행 간의 거래 등을 관할한다. 베를린 국가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폐 대출시장을 통해 리하이낸스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을 거래 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하고 용자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 또는 사업체에 참여할 수도 있다. 아 은행 업무의 주목적은 이윤을 내는 것이다. 은행의 기구로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동독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회칙의 변경은 총리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한다. 연간 수입을 통해 조성되는 예비금에 대해서는 동독 정부의 재무장관이 결정한다. 재무장관은 나아가 은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기능도 수행한다. 통일 이후에는 베를린 국가은행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연방정부의 재무장관에게 넘겨진다.

출처: DDR-Gesetzblatt 38, 504

**Gesetz
über die Staatsbank Berlin
vom 29. Juni 1990**

§ 1

(1) Die Staatsbank Berlin (nachfolgend Bank genannt) ist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juristische Person.

(2) Die Bank hat ihren Sitz in Berlin. Sie ist berechtigt, Zweigniederlassungen zu unterhalten.

(3) Der Gewährträger der Bank ist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Sie haftet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r Bank unbeschränkt. Die Gläubiger der Bank können den Gewährträger nur in Anspruch nehmen, soweit sie aus dem Vermögen der Bank nicht befriedigt werden. Der Gewährträger stellt sicher, daß die Bank ihre Aufgaben erfüllen kann (Anstaltslast).

(4) Das Grundkapital der Bank beträgt 250 Mio Mark/Deutsche Mark und ste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s kann durch Einlagen oder aus Eigenmitteln der Bank erhöht werden.

(5) Die Bank ist Rechtsnachfolger der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Bank tritt in die per 30. 6. 1990 bestehenden Verträge der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genüber Dritten ein.

§ 2

(1) Der Bank obliegt insbesondere:

1. die Wahrnehmung von Aufgaben aus dem Staats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s betrifft vor allem
 - die Führung des Ausgleichsfonds und weitere ihr in diesem Zusammenhang durch die Regierung übertragene Aufgaben;
 - die Verwaltung und Abwicklung der bis zur Währungs-~~umstellung eingegangenen Anlage- und Refinanzierungsbeziehungen~~ der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it den Geschäftsbanken;
 - die Verwaltung und Abwicklung der bei der 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konzentriert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Ausland;
2. die Durchführung von Bankgeschäften mit öffentlichen Körperschaften einschließlich der Treuhandanstalt;
3. die Mitwirkung bei der Finanzierung von öffentlichen Förderungsmaßnahmen zur strukturpolitischen Entwicklung der Wirtschaft, der Verbesserung der Infrastruktur, des Umweltschutzes, des sozialen Wohnungsbaus und anderer Förderungsprogramme auf dem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4. die bankmäßige Abwicklung von internationalen Handels-, Zahlungs- und Kreditabkomm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5. die Wahrnehmung der Vertret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n Bankräten bei der Internationalen Bank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der Internationalen Investitionsbank;
6. die Durchführung von Aufgaben des Zahlungs- und Verrechnungsverkehrs von Geld- und Kreditinstituten, ungeachtet der Vertragsfreiheit der Geschäftspartner.

(2) Zur Erfüllung der Aufgaben kann die Bank alle üblichen Bankgeschäfte durchführen, insbesondere Depositen unterhalten, sich auf Geld- und Kapitalmärkten refinanzieren und Wertpapiergeschäfte durchführen. Zur Beschaffung der erforderlichen Mittel für die Durchführung ihrer Aufgaben kann die Bank Schuldverschreibungen ausgeben und Darlehen aufnehmen. Die Bank kann sich an anderen Geld- und Kredit-

instituten und wirtschaftlichen Unternehmen beteiligen. Sie ist zur Anlage von Müdelgeld geeignet.

§ 3

Die Geschäfte der Bank sind nach kaufmännischen Grundsätzen zu führen. Die Erzielung von Gewinn ist nicht Hauptzweck des Geschäftsbetriebes.

§ 4

(1) Organe der Bank sind der Vorstand und der Verwaltungsrat.

(2) Aufgaben und Befugnisse der Organe regelt, soweit da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die Satzung.

§ 5

(1) Der Vorstand führt die Geschäfte der Bank.

(2) Der Vorstand vertritt die Bank gerichtlich und außergerichtlich. Vorstandsmitgliedern gegenüber wird die Bank durch den Verwaltungsratsvorsitzenden vertreten.

(3) Der Vorstand besteht aus dem Vorsitzenden, dem stellvertretenden Vorsitzenden und weiteren ordentlichen und stellvertretenden Mitgliedern. Die Vorstandsmitglieder werden vom Verwaltungsrat für höchstens 5 Jahre bestellt. Eine wiederholte Bestellung bzw. vorzeitige Abberufung ist zulässig.

§ 6

(1) Der Verwaltungsrat beschließt die Richtlinien für die Geschäftspolitik der Bank und überwacht ihre Geschäftsführung.

(2) Der Verwaltungsrat der Bank besteht aus

1. dem Vorsitzenden und seinem Stellvertreter, sie werden vom Ministerpräsidenten bestellt;
2. fünf Vertretern von wirtschaftlichen Unternehmen, die vom Ministerpräsidenten auf Vorschlag von Wirtschaftsverbänd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und Handwerkskammern bestellt werden;
3. fünf Vertretern der Landesregierungen; bis zu deren Bildung werden auf Vorschlag der zuständigen Regierungsbeauftragten der Bezirke fünf Vertreter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bestellt;
4. fünf gewählten Vertretern der Belegschaft.

(3) Die Amtsdauer der Mitglieder des Verwaltungsrates beträgt 3 Jahre.

(4) Der Verwaltungsrat faßt,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eine Beschlüsse mit einfacher Mehrheit der abgegebenen Stimmen, wobei jedes Mitglied 1 Stimme hat. Bei Stimmengleichheit entscheidet die Stimme des Vorsitzenden. Zur Beschlußfähigkeit ist die Anwesenheit von mindestens der Hälfte der Mitglieder erforderlich. Die Satzung kann eine Beschlußfassung im Wege der schriftlichen Abstimmung oder auf eine andere geeignete Art und Weise zulassen.

§ 7

Zur Unterstützung der Tätigkeit der Organe der Bank bei der Durchführung der Aufgaben gemäß § 2 kann ein Beirat gebildet werden. Die Mitglieder des Beirates werden vom Vorsitzenden des Verwaltungsrates berufen.

§ 8

(1) Die Satzung der Bank wird vom Vorstand aufgestellt, vom Verwaltungsrat beschlossen und bedarf der Bestätigung durch den Ministerrat.

(2) Änderungen der Satzung können vom Verwaltungsrat mit einer Mehrheit von zwei Dritteln der abgegebenen Stimmen, mindestens jedoch der Hälfte aller Mitglieder beschlossen werden. Sie bedürfen der Bestätigung durch den Ministerrat.

§ 9

(1) Das Geschäftsjahr ist das Kalenderjahr.

(2) Die Bank ist verpflichtet, nach den für Kreditinstitute geltenden Bestimmungen Jahresabschlüsse und Lageberichte aufzustellen, prüfen zu lassen und bekanntzumachen.

(3) Der Verwaltungsrat bestimmt den Abschlußprüfer.

(4) Der Verwaltungsrat entscheidet über die Genehmigung des Jahresabschlusses innerhalb der ersten 6 Monate nach Abschluß eines Geschäftsjahres.

§ 10

(1) Über die Bildung von Rückstellungen entscheidet der Verwaltungsrat auf Vorschlag des Vorstandes.

(2) Über die Bildung von Rücklagen aus dem Jahresüberschuß und die weitere Gewinnverwendung entscheidet der Minister der Finanzen auf Vorschlag des Verwaltungsrates.

§ 11

Die Vorschriften über die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gelten nicht für die Bank.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undzwanzigsten Jun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 12

Der Minister der Finanzen nimmt die Staatsaufsicht über die Bank bei der Durchführung der ihr mit diesem Gesetz übertragenen Aufgaben in Übereinstimmung mit den Regelungen des Staats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ahr.

§ 13

(1) Die Bank ist als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für weitere Gewährträger offen. Die Aufnahme weiterer Gewährträger bedarf einer entsprechenden Änderung dieses Gesetzes.

(2) Die Bank kann nur durch Gesetz aufgelöst werden. Das nach der Abwicklung verbleibende Vermögen fällt dem Gewährträger zu.

§ 14

Dieses Gesetz tritt am 1. Juli 1990 in Kraft.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as Verfahren der Schiedsstellen für Arbeitsrecht vom 29. Juni 1990

Erster Abschnitt

Grundsätzliche Bestimmungen

§ 1

Zuständigkeit

Zur Beilegung von Rechtsstreitigkeiten zwischen Arbeitnehmern und Arbeitgebern aus dem Arbeitsverhältnis sind Schiedsstellen für Arbeitsrecht zuständig.

§ 2

Vorrang des Schiedsstellenverfahrens

(1) Zur Entscheidung über die in § 1 genannten Streitigkeiten kann das Kreisgericht erst nach Ausschöpfung des Verfahrens vor der Schiedsstelle angerufen werden. Das gilt auch dann, wenn im Kündigungsschutzgesetz nach Maßgabe des Gesetzes vom 21. Juni 1990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Bl. I Nr. 34 S. 357) oder in anderen Rechtsvorschriften die Anrufung des Kreisgerichtes vorgesehen ist. Das Kreisgericht ist ohne die vorherige Anrufung der Schiedsstelle in den Fällen zuständig, in denen nach den Vorschriften der Zivilprozeßordnung seine unmittelbare Anrufung erfolgen kann.

(2) Ist für die Geltendmachung des Anspruches eine Frist für die Anrufung des Kreisgerichtes vorgesehen, wird diese auch durch die Anrufung der Schiedsstelle gewahrt.

(3) Das Kreisgericht kann angerufen werden, wenn die Schiedsstelle innerhalb von 2 Monaten nach Antragstellung keine Entscheidung herbeigeführt hat.

§ 3

Unabhängigkeit

(1) Die Mitglieder der Schiedsstelle sind in ihrer Entscheidung unabhängig und nur an das Gesetz gebunden.

(2) Die Mitglieder der Schiedsstelle dürfen in der Ausübung ihrer Tätigkeit nicht gestört oder behindert werden. Sie dürfen wegen ihrer Tätigkeit nicht benachteiligt oder begünstigt werden; dies gilt auch für ihre berufliche Entwicklung.

(3) Die Kündigung eines Mitgliedes der Schiedsstelle ist unzulässig, es sei denn, daß Tatsachen vorliegen, die den Arbeitgeber zur Kündigung aus wichtigem Grund ohne Einhaltung einer Kündigungsfrist berechtigen.

(4) Die fristlose Kündigung von Mitgliedern der Schiedsstelle bedarf der Zustimmung des Betriebsrates. Verweigert dieser seine Zustimmung, so kann diese auf Klage des Arbeitgebers durch das Kreisgericht ersetzt werden, wenn die fristlose Kündigung unter Berücksichtigung aller Umstände gerechtfertigt ist. In dem Verfahren vor dem Kreisgericht ist der betroffene Arbeitnehmer Verklagter. Das Kreisgericht entscheidet nach mündlicher Verhandlung, in der der Verklagte anzuhören ist, durch unanfechtbaren Beschluß.

(5) Nach Beendigung der Amtszeit ist die Kündigung eines Mitgliedes der Schiedsstelle innerhalb eines Jahres, jeweils vom Zeitpunkt der Beendigung der Amtszeit an gerechnet, unzulässig, es sei denn, daß Tatsachen vorliegen, die den Arbeitgeber zur Kündigung aus wichtigem Grund ohne Einhaltung einer Kündigungsfrist berechtigen; dies gilt nicht, wenn die Abberufung eines Mitgliedes auf ein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beruht.

§ 4

Vertretung vor der Schiedsstelle

(1) Antragsteller und Antragsgegner können das Verfahren selbst führen oder sich vertreten lassen.

문서 번호 44

서방국가와 서독의 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의 채무에 관한 규정

1990 년 7 월 4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내각

내용:

이 문서는 경제및화폐사회공동체의 실현 이후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이 외국 또는 서독의 계약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무 또는 채권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동독의 국영 대외무역업체들의 채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동독 경제부에 정리특임관실을 설치한다. 대외무역업체들이 자본회사를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본회사가 대외무역업체의 후계자가 된다. 자본회사의 창설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업체가 보유한 채권과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난 후에 남는 만큼의 재산을 자본금으로 넘겨 받을 수 있다. 재산의 가치는 1990 년 7 월 1 일자로 회계정산한 대차대조표에 의해 결정된다. 1990 년 12 월 31 일까지 대외무역업체들에 대한 회계정산을 마치고 그 때까지 남은 채무과 채권관계는 신탁청에 의해 설립될 자본회사에 위임하도록 한다. 이러한 청산작업은 1991 년 3 월 31 일까지 마치도록 한다.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이 더 많아서 얻게 되는 재원은 신탁청으로 이전한다. 대외무역업체의 은행구좌는 독일대회무역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한다 (이 은행은 동독에서 국가 간의 차관제공, 재정거래 그리고 채권과 채무관계를 처리하던 특수은행이다). 대외무역업체의 정리특임관실에 의해서 작성된 인력계획서는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달 소요되는 재정 또한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리특임관은 1990 년부터 매월 정리현황에 관하여 경제부 대외무역국에 보고한다. 이미 자본회사로 전환된 대외무역업체 또한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42, S. 662-664, Ausgabetag 20.07.1990

**Verordnung
über die Aufrechterhaltung von Leistungen
betrieblicher und betriebseigener Kinderkrippen
vom 4. Juli 1990**

§ 1

Geltungsbereich

Diese Verordnung gilt für

- Unternehmen,
- Kombinate, Betriebe, Genossenschaften und Einrichtungen (nachstehend Betriebe genannt),
- Kommunalorgane,
- Handwerkskammer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 2

Durchsetzung vertraglich vereinbarter Leistungen zur Kinderbetreuung

(1) Von Betrieben in Kommunalverträgen, Kooperationsvereinbarungen vereinbarte Leistungen zur Kinderbetreuung sind zu erfüllen. Diese vertraglichen Vereinbarungen dürfen nicht einseitig gelöst werden.

(2) Bei Übergang der Betriebe in eine andere Rechtsträgerschaft ist durch definitive Festlegung der Rechtsnachfolge zu gewährleisten, daß die Verpflichtungen der Betriebe gemäß Absatz 1 und die dazu erforderlichen Kapazitäten der betrieblichen und betriebseigenen Kinderkrippen übernommen oder weitergeführt werden.

(3) Betriebe, die Verpflichtungen aus vertraglichen Vereinbarungen gemäß Absatz 1 nicht erfüllen, sind zur Erstattung der Kosten an diejenigen Betriebe oder andere Rechtsträger verpflichtet, die diese Leistungen übernehmen. Die Koordination erfolgt durch die Kommunalorgane.

§ 3

Übernahme von betrieblichen Kapazitäten der Kinderbetreuung in kommunale bzw. andere Rechtsträgerschaft

(1) Werden bei der Bild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von Betrieben als Gesellschafter Aufgaben und Kapazitäten zur Kinderbetreuung eingebracht, sind sie im Gesellschaftsvertrag aufzunehmen. Die von den Kapitalgesellschaften diesbezüglich übernommenen und vertraglich vereinbarten Aufgaben werden gemäß § 5 Abs. 2 dieser Verordnung finanziert.

(2) Werden bei Bild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Aufgaben und Kapazitäten zur Kinderbetreuung nicht übernommen, sind sie bei Zustimmung der kommunalen Organe in kommunale Rechtsträgerschaft zu übernehmen.

(3) Bei der Übernahme von Kapazitäten der Kinderbetreuung in eine andere Rechtsträgerschaft sind den in diesen Einrichtungen Tätigen durch den bisherigen Beschäftigungsbetrieb im Zusammenwirken mit dem neuen Rechtsträger Überleitungsverträge anzubieten.

§ 4

Sicherung von betrieblichen Kapazitäten der Kinderbetreuung bei Betriebsauflösungen

Bei Auflösung von bzw. sich in Liquidation befindlichen Betrieben ist durch die Kommunalorgane daran mitzuwirken, die in diesen Betrieben vorhandenen Kapazitäten der Kinderbetreuung in Übereinstimmung mit dem Bedarf an Kinderkrippenplätzen sowie an Fortbildungs- und Umschulungsleistungen in eine andere Rechtsträgerschaft neu einzuordnen.

§ 5

Finanzierung von betrieblichen Kinderkrippen

(1) Leistungen der Unternehmen und Betriebe zur Kinderbetreuung sind gemeinnütziges Anliegen der Gesellschaft und werden als besonders förderungswürdig anerkannt.

§ 6

Ordnungsstrafbestimmungen

(1)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als Leiter oder leitender Mitarbeiter von Unternehmen oder Betrieben den Festlegungen gemäß §§ 2, 3 Abs. 1 und 6 zuwiderhandelt, kann mit Verweis oder Ordnungsstrafe von 10 DM bis 500 DM belegt werden.

(2) Eine Ordnungsstrafe bis zu 1 000 DM kann ausgesprochen werden, wenn bei einer vorsätzlichen Ordnungswidrigkeit gemäß Absatz 1 die gesellschaftlichen Interessen grob mißachtet wurden oder sie aus Vorteilsstreben oder wiederholt geahndet wurde.

(3)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obliegt dem zuständigen Landrat oder Oberbürgermeister.

(4) Für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und den Ausspruch von Ordnungsstrafmaßnahmen gilt das Gesetz vom 12. Januar 1968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OWG — (GBl. I Nr. 3 S. 101).

§ 7

(1) Diese Verordnung tritt mit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2) Durchführungsbestimmungen zu dieser Verordnung erlassen der Minister für Familie und Frauen und der Minister der Finanzen.

Berlin, den 4. Juli 1990

**Der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 Maizière
Ministerpräsident

Dr. Schmidt
Minister für Familie und Frauen

**Verordnung
zur Abwicklung 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realisierter Verträge in westlichen Währungen
(konvertierbare Währungen, Clearing-Währungen
und Verrechnungseinheiten) und Deutschen Mark
gegenüber Devisenausländern und Vertragspartn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Westberlin
vom 4. Juli 1990**

Auf der Grundlage des Gesetzes über den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hang 1, Artikel 8 (im folgenden Staatsvertrag genannt), wird folgendes verordnet:

§ 1

Diese Verordnung gilt für volkseigene Außenhandelsbetriebe (im folgenden AHB genannt), die per 30. Juni 1990 in ihrem Buchwerk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in westlichen Währungen und Deutschen Mark gegenüber Devisenausländern und Vertragspartn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Westberlin ausweisen.

§ 2

(1) Die AHB gehen mit den gemäß § 1 bezeichnet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in Abwicklung. Ausnahmen entscheidet der Minister für Wirtschaft in Abstimmung mit dem Minister der Finanzen und dem Vorsitzenden des Direktoriums der Anstalt zu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des Volksvermögens.

(2) Der Minister für Wirtschaft weist das Abwicklungsverfahren an und setzt in den Außenhandelsbetrieben Abwicklungsbeauftragte ein.

(3) Die „AHB in Abwicklung“ sind im Register beim Staatlichen Vertragsgericht als „in Abwicklung“ zu führen.

§ 3

Die „AHB in Abwicklung“ sind gemäß den rechtsgültigen kommerziellen Verträgen weiterhin Gläubiger bzw. Schuldner und für den Nachweis 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im Buchwerk sowie in Übereinstimmung mit dem Gesetz über den Staatsvertrag, Anhang 1, Artikel 8, für die Realisierung der per 30. Juni 1990 bestehenden Forderungen und Tilgung der per 30. Juni 1990 bestehenden Verbindlichkeiten verantwortlich.

§ 4

(1) Die AHB können mit Teilen ihres Vermögens, ausgenommen der gemäß § 1 bezeichnet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Kapitalgesellschaften gründen.

(2) Die gegründeten Kapitalgesellschaften sind Rechtsnachfolger der volkseigenen Außenhandelsbetriebe. Ausgenommen hiervon sind die bezeichnet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gemäß § 1.

(3) Für die Gründung der Kapitalgesellschaften dürfen nur so viel Vermögensanteile der AHB übertragen werden, daß in dem Umfang Vermögen verbleibt, wie es für die materielle und finanzielle Sicherung der Abwicklung erforderlich ist.

§ 5

Die Vermögenswerte sind in den DM-Eröffnungsbilanzen per 1. Juli 1990 auszuweisen.

§ 6

(1) Von den „AHB in Abwicklung“ sind bis zum 31. Dezember 1990 schrittweise die nicht realisiert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zusondern und an eine von der Treuhandanstalt zu gründende spezielle Kapitalgesellschaft zu übertragen. Die Abwicklungsverfahren sind so durchzuführen, daß sie bis spätestens 31. März 1991 beendet werden können.

(2) Für die gemäß Absatz 1 ausgesonderten und übertragen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tritt die in Absatz 1 genannte Kapitalgesellschaft in alle Rechte und Pflichten ein.

(3) Soweit nach Übertragung 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im Ergebnis des Abwicklungsverfahrens ein Vermögensüberschuß besteht, ist dieser auf der Basis der Abschlußbilanz an die Treuhandanstalt zu übertragen.

§ 7

(1) Gegenstand der Abwicklung sind alle im Buchwerk der AHB nachgewiesen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realisierter Ex- und Importverträge in westlichen Währungen und DM gegenüber Devisenausländern und Vertragspartn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Westberlin. Das sind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 Warenlieferungen und Leistungen aus Ex- und Importverträgen,
- Zinsen aus Zielgeschäften Ex- und Import sowie Verbindlichkeiten aus Vertreterprovision.

(2) Die Kapitalgesellschaften gemäß § 4 haben die per 30. Juni 1990 nicht vollständig realisierten Ex- und Importverträge einschließlich der erhaltenen bzw. vorgenommenen Anzahlungen zu übernehmen.

(3)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n Verkehrsträgern der DDR in westlichen Währungen werden den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visenausländern gleichgestellt.

§ 8

(1) Die mit der Inventur per 30. Juni 1990 nachgewiesen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in die Abschlußbilanz per 30. Juni 1990 und die DM-Eröffnungsbilanz per 1. Juli 1990 einzubeziehen.

In die DM-Eröffnungsbilanz per 1. Juli 1990 sind

- die Forderungen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aus der Umstellung der Guthaben zur Finanzierung von Auslandsverbindlichkeiten (Importguthaben),
- die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aus der Umstellung der Finanzierung der Auslandsforderungen in Mark (Forderungskredite)

einzustellen.

(2) Der Status 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ist für die Fälligkeiten 1990 (nach Monaten) und die einzelnen Folgejahre

- nach Ländern,
- nach Währungen und
- zum Tagesmittelkurs der Deutschen Bundesbank in Frankfurt am Main am 2. Juli 1990 in DM zu bewerten. Dieser Status ist
- de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Bereich Außenwirtschaft/Integration,
- dem Ministerium der Finanzen und der
- Deutschen Außenhandelsbank AG (im folgenden DABA genannt) bis zum 20. Juli 1990 einzureichen.

§ 9

Die Kontenführung der „AHB in Abwicklung“ ist ausschließlich über die DABA vorzunehmen. Auftretende Kursdifferenzen sind über die DABA mit dem Staatshaushalt zu verrechnen. Zur Durchführung der Verrechnung der Kursdifferenzen mit den AHB sind durch die DABA methodische Regelungen zu erlassen.

§ 10

(1) Die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auf Einzelkonten im Buchwerk der AHB revisionssicher nachzuweisen.

(2) Nach dem Geldeingang sind durch den AHB zu gleichen Teilen der Exportkredit bei der DABA und die Verbindlichkeit an den Ausgleichsfonds zu tilgen. Die Regulierungen mit dem Ausgleichsfonds sind tagfertig vorzunehmen.

(3) Die Tilgung der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n ausländischen Vertragspartnern erfolgt aus dem Guthaben der „AHB in Abwicklung“ aus DM-Anlagen bei der DABA (Importguthaben) und Forderungen an den Ausgleichsfonds.

§ 11

Für die Finanzierung der Zinsaufwendungen sind durch die „AHB in Abwicklung“ Zinseinnahmen einzusetzen aus:

- DM-Anlagen aus zeitweise nicht benötigten Importguthaben bei der DABA,
- DM-Forderungen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für umgestellte Importforderungen und
- ausländischen Vertragspartnern gewährten Zahlungszielen im Export.

Der Saldo aus Zinseinnahmen und -ausgaben ist monatlich mit dem Staatshaushalt zu verrechnen.

§ 12

(1) Die entstehenden Kosten aus der Tätigkeit der „AHB in Abwicklung“ werden den AHB auf Antrag erstattet. Aus-

gehend von den Kriterien strengster Sparsamkeit sind die erforderlichen

- Personalkosten,
- Kosten für Mieten und Nutzungsentgelte,
- Kosten für Material,
- sonstige Verwaltungskosten

im Antrag detailliert auf der Grundlage des Kontenrahmens des Außenhandels revisionssicher nachzuweisen.

(2) Durch den Abwicklungsbeauftragten des AHB ist mit der Bildung des „AHB in Abwicklung“ ein Stellenplan mit den vorgesehenen Gehaltsvergütungen an das Ministerium für Wirtschaft, Bereich Außenwirtschaft/Integration, zur Genehmigung einzureichen.

(3) Der monatliche Finanzbedarf gemäß Absatz 1 Satz 2 ist bis zum 20. des Monats für den Folgemonat bei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Bereich Außenwirtschaft/Integration, anzu-melden.

§ 13

Die Abwicklungsbeauftragten haben über den aktuellen Stand

- 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nach Ländern und Währungen per Ende des vorherigen Monats (bis 10. Kalendertag des Folgemonats),
- der täglich im Folgemonat zu bedienenden Auslandsverbindlichkeiten und zu erwartenden Einnahmen nach Ländern und Währungen (bis 20. Kalendertag),
- der im Folgemonat zu erwartenden Zinseinnahmen und -ausgaben nach Ländern und Währungen und
- der Inanspruchnahme der finanziellen Zuwendungen zur Abwicklung der AHB entsprechend der Gliederung des Kontenrahmens des Außenhandels (bis 20. Kalendertag)

beginnend ab August 1990 monatlich das Ministerium für Wirtschaft, Bereich Außenwirtschaft/Integration, Ministerium der Finanzen und die DABA zu informieren.

§ 14

(1) Außenhandelsbetriebe, die auf der Grundlage der Verordnung vom 1. März 1990 zur Umwandlung von volkseigenen Kombinat, Betrieben und Einrichtungen in Kapitalgesellschaften (GBl. I Nr. 14 S. 107) bereits in Kapitalgesellschaften umgewandelt wurden, werden in den Geltungsbereich dieser Verordnung einbezogen.

(2) In diesen Kapitalgesellschaften sind Abwicklungsbe-reiche zu bilden. Die abzuwickelnd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Bestandteil der Bilanz der Kapitalgesellschaft.

(3) Für die gesonderte Abwicklung solch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die Geschäftsführer verantwortlich. Sie haben das Recht, de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Bereich Außenwirtschaft/Integration, Abwicklungsbeauftragte vorzuschlagen und Kostenerstattung gemäß § 12 zu beantragen.

(4) Die Bestimmungen der §§ 6 bis 13 gelten entsprechend.

§ 15

Diese Verordnung tritt mit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Berlin, den 4. Juli 1990

**Der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 Maizière
Ministerpräsident

Dr. Romberg
Minister der Finanzen

Dr. Pohl
Minister für Wirtschaft

Anordnung über die Tätigk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r Rechtsanwäl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7. Juni 1990

§ 1

Geltungsbereich

Diese Anordnung regelt (auf der Grundlage der Gegenseitigkeit) Möglichkeiten und Befugnisse für nach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 Rechtsanwälte zur Berufsausüb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2

Dienstleistungsfreiheit

(1) Nach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zugelassene Rechtsanwälte, die nicht über eine Niederlassung oder ein Zweitbüro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erfügen, sind berechtigt, im Geltungsbereich dieser Anordnung anwaltliche Tätigkeit auszuüben. Sie haben bei der Ausübung dieser Tätigkeit die Stellung eine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n Rechtsanwalts, insbesondere dessen Rechte und Pflichten, soweit diese nicht die Zugehörigkeit zu einer Rechtsanwaltskammer, den Wohnsitz und das Rechtsanwaltsbüro betreffen.

(2) Die Befugnis zur Ausübung anwaltlicher Tätigkeit schließt jedoch das Vertreten von Auftraggebern

1. vor den Senaten für Zivil-, Familien- und Handelsrecht der Bezirksgerichte und
2. vor den Senaten für Zivil-, Familien- und Handelsrecht des Obersten Gericht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icht ein.

(3) Die in § 2 Abs. 1 bezeichneten Rechtsanwälte beachten bei der Ausübung ihrer Tätigkeit im Geltungsbereich der Verordnung vom 22. Februar 1990 über die Tätigkeit und die Zulassung von Rechtsanwälten mit eigener Praxis (GBl. I Nr. 17 S. 147) die beruflichen Regeln für einen auf der Grundlage dieser Verordnung zugelassenen Rechtsanwalt. Die berufrechtliche Ahndung schuldhafter Verletzung beruflicher Pflichten ist den zuständigen Stel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rbehalten. Diese werden von dem Verdacht einer solchen Pflichtverletzung unterrichtet.

§ 3

Niederlassungsfreiheit

(1) Nach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 Rechtsanwälte sind berechtigt, sich im Geltungsbereich dieser Anordnung niederzulassen, wenn sie in die für den Ort der beabsichtigten Niederlassung zuständige Rechtsanwaltskammer aufgenommen sind.

(2) Die in Absatz 1 bezeichneten Rechtsanwälte führen im Geltungsbereich der Verordnung vom 22. Februar 1990 über die Tätigkeit und die Zulassung von Rechtsanwälten mit eigener Praxis die Berufsbezeichnung „Rechtsanwalt“ unter Zusatz der Rechtsanwaltskammer, der sie nach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angehören.

(3) Mit der Aufnahme in die Rechtsanwaltskammer ist die Pflicht zur Eröffnung eines Büros innerhalb von 3 Monaten verbunden. Sie ist gegenüber dem Minister der Justiz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Rechtsanwaltskammer anzuzeigen.

§ 4

Umfang der Rechtsbesorgung

Rechtsanwälte, die sich nach dieser Anordnung niedergelassen haben, sind berechtigt zur Rechtsbesorgung i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schließlich des Rechts

독일 통일 실현 조약 (통일 조약)에 관한 제 1 차 협상

1990 년 7 월 6 일

담당자 / 기관: 드 메지에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Günther Krause) 정무 차관(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 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바이에른(Bayern) 주, 함부르크(Hamburg) 시, 바덴-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 베를린(Berlin) 시, 유럽 공동체 위원회(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내용:

이 문서는 통일조약의 1 차 협상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독 정부는 서독의 기본법 제 23 조에 의거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에 찬성하며 1990 년 12 월에 독일 전역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 1 대 전 독일 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동독 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는 조약을 제 2 차 국가 조약이 아니라 “통일 조약(Einigungsvertrag)”으로 칭하도록 한다. 동독 정부의 입장은 전 독일 총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 동독지역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독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서독 정부는 “통일 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서독 기본법 제 23 조는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지역에서 스스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독 정부는 가입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통일조약의 초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조약의 협상과 관련하여 동독 정부가 협상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일 조약은 양 측의 입법 기관으로부터 2/3 찬성을 받아 비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를 조약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서독 정부는 전 독일 선거가 편입 전이나 후에 실시되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서독 정부는 전 독일 의회에 독일 연방 수도에 관한 결정을 위임하기를 원하였다. 반면 동독 측은 통일독일의 수도의 문제를 “통일 조약”을 통해 규정하기를 원하였고, 베를린을 수도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독 정부는 그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서독 정부는 “독일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명칭과 기존의 „국가(Deutschlandlied)”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동독 측은 통일된 독일의 국호를 “연방 독일 공화국(Deutsche Bundesrepublik)”으로 하고 국가도 가사 내용 상 기존의 도이칠란트리트의 멜로디와 잘 어울리는 동독 국가를 1 절로, 서독 국가의 3 절을 새로운 „국가“의 2 절로 구성하여 새로운 독일 „국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 동독 정부는 신탁 관리청(Treuhandstelle)의 업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오로지 동독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독지역에 새로이 만들어질 연방주의 재건을 담당할 “재건부(Aufbauministerium)” 혹은 동독의 주정부 총리들로 구성된 특별 회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동독 측은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적 목표(Staatszielbestimmung)에 관한 조항과 사회적 보장권에 관한 조항은 개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 회담 참석자들은 기타 절차와 차후 일정에 합의 하였다.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Erste Verhandlungsrunde über den Vertrag zu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
Berlin, 6. Juli 1990**

BK, 132 – 35400 De 12 NA 5 Bd. 2. – Mit Kopfzeile: Bundesminister des Innern. Bonn, 8. Juli 1990. – Mit Schnellbrief des MR Schnapauff an Chef BK Seiters, 9. Juli 1990, Gesch.-Z. GE – 020 056/0 VS-NfD.

– Ergebnisprotokoll –

Am 6. Juli 1990 haben Vertreter beider deutschen Staaten in Berlin Verhandlungen über die im Zusammenhang mit einem Beitritt der DDR gem. Art 23 Satz 2 GG zu treffenden Regelungen aufgenommen.

1. Zusammensetzung der Delegationen

Delegationsleitung:

– auf seiten der DDR

Ministerpräsident de Maizière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Dr. Krause

– auf sei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minister Dr. Schäuble.

Vertreten waren außerdem

– auf seiten der DDR

Ministerien des Innern, für Wirtschaft, der Finanzen, der Justiz, für Umwelt, Naturschutz, Energie und Reaktorsicherheit, für Arbeit und Soziales, für Ernährung, Land- und Forstwirtschaft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

– auf sei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Chef des Bundeskanzleramtes, Auswärtiges Amt, Bundesministerien der Justiz, der Finanzen, für Wirtschaft,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Nordrhein-Westfalen, Bayern, Hamburg, Baden-Württemberg, Niedersachsen, Berlin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2. Einleitende Erklärungen

MP de Maizière würdigte eingangs die Aufnahme der Verhandlungen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zu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und äußerte die Erwartung, daß dieser Tag einmal als historisch für Deutschland und Europa angesehen werde. Die DDR sei bereit und entschlossen, die staatliche Einheit nach über 40 Jahren der Teilung durch einen Beitritt zu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zum 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 gem. Art 23 GG zu vollenden, und strebe die Wahl des ersten gesamtdeutschen Parlaments im Dezember 1990 an.

Die DDR habe den Wunsch, über die Voraussetzungen des Beitritts m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en Vertrag zu schließen, der nach ihrer Meinung nicht als zweiter Staatsvertrag, sondern als »Einigungsvertrag« bezeichnet werden sollte. In den in großer Breite zu führenden Verhandlungen gehe es darum, eine Balance herzustellen zwischen dem, was auf beiden Seiten in mehr als 40 Jahren unterschiedlich gewachsen ist. Die Teilung sei nur durch Teilen zu überwinden. Dies gelte insbesondere für die Regelung der finanziellen Beziehungen und des Finanzausgleichs.

Besonders bedeutsam sei die Sicherung des äußeren Friedens. Dies sei nicht nur eine Aufgabe der 2+4-Gespräche. Auch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müßten miteinander verbindliche Regelungen treffen, die den Respekt und die Anerkennung unserer Nachbarn finden.

Die Besonderheit des zu verhandelnden Vertrages bestehe darin, daß er zwischen zwei Partnern geschlossen werde, die zueinander finden wollen und sollen und von denen einer dabei untergehen werde. Deshalb gehe es darum, die Interessen der Bürger dieses Partners zu sichern. Dazu gehöre u.a., daß die politische Einigung über die Eigentumsfragen juristisch festgeschrieben werde. Eine Verständigung müsse vor allem über folgende Fragen gefunden werden:

- Hauptstadt,
- staatliche Symbole,
- Finanzen der 5 neugebildeten Länder sowie des künftigen Landes Berlin,
- Zuständigkeit und Verantwortlichkeit für die Treuhandstelle.

BM Dr. Schäuble würdigte die historische Bedeutung der Absicht der DDR, die deutsche Einheit durch einen Beitritt gem. Art. 23 GG zu vollenden. Er wies darauf hin, daß Art. 23 GG eine einseitige Erklärung für den Beitritt vorsieht. Wenn die DDR in diesem Zusammenhang eine vertragliche Regelung wünsche, wozu die Bundesregierung bereit sei, seien die Themen dafür in erster Linie von der DDR zu bestimmen. Die Bundesregierung gehe daher nicht bereits mit einem Vertragsentwurf in die Verhandlungen, sondern die in dem Vertrag zu treffenden Regelungen seien in einem offenen Prozeß zu entwickeln. Er erklärte sich einverstanden, für den Vertrag allein den Begriff »Einigungsvertrag« zu verwenden. BM Dr. Schäuble wies ferner im Hinblick auf die zu erwartenden Änderungen des Grundgesetzes auf die Notwendigkeit der Ratifizierung des Vertrages mit einer 2/3-Mehrheit in den gesetzgebenden Körperschaften hin. Da die Ablehnung eines solchen Vertrages sehr schwerfalle, sei es besonders wichtig, auf die Belange der Parlamente Rücksicht zu nehmen. Um den Vorwurf des Mißbrauchs zu vermeiden, sei eine Beschränkung der zu treffenden Regelungen auf das unbedingt Notwendige erforderlich. Im übrigen seien beide Seiten in den Verhandlungen nicht Verhandlungsgegner, sondern Partner, die gemeinsam die deutsche Einheit verwirklichen wollen.

Nach Auffassung von MP de Maizière sollte der Vertrag nach dem Muster des Staatsvertrages über di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in einen allgemeinen Teil mit klarer Beschreibung der Ziele und einen besonderen Teil (Anlagen) gegliedert werden, bei dem große Detailtreue nötig sein werde. MP de Maizière sprach sich dafür aus, die Verhandlungen bis Ende August und das Ratifikationsverfahren noch im September abzuschließen.

3. Wahl des ersten gesamtdeutschen Parlaments

Unter Hinweis darauf, daß hierüber noch nicht abschließend Konsens in der die DDR-Regierung tragenden Koalition erzielt worden sei, vertrat MP de Maizière die Auffassung, daß der Beitritt der DDR nach den Wahlen zum ersten gesamtdeutschen Parlament wirksam werden sollte. Er führte hierfür folgende Gründe an, die er als für ihn zwingend bezeichnete:

- Nach den Wahlen könne die Bildung der neuen gesamtdeutschen Regierung schwierig sein und längere Zeit in Anspruch nehmen. Die DDR-Regierung sei andererseits nur bis zu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im Amt. Dieser müsse daher zu einem möglichst späten Termin nach der Wahl erfolgen, um so lange wie möglich eine Vertretung der Interessen der Bevölkerung in der DDR durch eine von ihr gewählte Regierung zu gewährleisten.
- Einer einheitlichen Wahl in einem einheitlichen Wahlgebiet nach einheitlichem Wahlrecht stünden unüberwindliche praktische Schwierigkeiten entgegen. U.a. könnten im Hinblick auf die am 14. Oktober vorgesehenen Landtagswahlen in den künftigen Ländern der DDR die Kandidatenaufstellungen nicht innerhalb der vom Bundeswahlgesetz vorgeschriebenen Fristen vor Wahlen zum gesamtdeutschen Parlament am 2. Dezember 1990 erfolgen.
- Im Zuge der friedlichen Revolution in der DDR im Herbst 1989 hätten sich viele politische Gruppierungen gebildet. Obwohl inzwischen, insbesondere durch die Volkskammerwahlen und die Kommunalwahlen, bereits ein Klärungsprozeß erfolgt sei, hätte eine einheitliche Wahl in einem einheitlichen Wahlgebiet mit einer einheitlichen Sperrklausel von 5% zur

Folge, daß bei Zugrundelegung der Ergebnisse der Volkskammerwahlen etwa 30% der Wähler in den 5 neugebildeten Ländern nicht im ersten gesamtdeutschen Parlament repräsentiert wären.

BM Dr. Schäuble führte aus, daß auch innerhalb der Bundesregierung und der sie tragenden Koalition hinsichtlich der Wahlmodalitäten noch nicht in allen Fragen Konsens bestehe. Einigkeit bestehe darüber, daß eine Wahl sowohl vor als auch nach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verfassungsrechtlich möglich sei.

– Vor dem Beitritt könne die Wahl in den 5 Ländern der DDR aufgrund eines möglichst weitgehend dem Bundeswahlgesetz entsprechenden Wahlgesetzes der DDR erfolgen. Im Rahmen der Überleitungsgesetzgebung im Zusammenhang mit dem »Einigungsvertrag« sei für diesen Fall die Rechtsgrundlage für den Erwerb der Mitgliedschaft der in der DDR gewählten Abgeordneten im gesamtdeutschen Parlament zu schaffen.

– Eine Wahl nach Wirksamwerden des Beitritts müsse nach einheitlichem Verfahren erfolgen und erfordere wegen der im Bundeswahlgesetz bestimmten Fristen, die aus Anlaß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en nicht verkürzt werden sollten, eine Vorlaufzeit von mehreren Monaten.

Mit dem Hinweis, daß er zugesagt habe, auch diese Variante vorzutragen, erläuterte BM Dr. Schäuble die Möglichkeit, vor der staatlichen Einheit auf der Grundlage von Art. 8 des Verfassungsgrundsatzgesetzes der DDR¹ eine vertragliche Grundlage für eine Wahl nach Wirksamwerden des Beitritts zu schaffen. Auch in diesem Fall müßten die Fristen des Bundeswahlgesetzes eingehalten werden.

BM Dr. Schäuble sprach sich dafür aus, daß in der Wahlrechtsfrage Optionen nicht durch Fristablauf erledigt werden sollten, wobei er betonte, daß allein die DDR zu entscheiden habe, zu welchem Zeitpunkt sie den Beitritt erklärt.

MP de Maizièrre äußerte die Erwartung, daß in der DDR eine Entscheidung bis Ende Juli getroffen werde.

4. Über folgende Einzelfragen fand ein erster Meinungs austausch statt.

4.1 Hauptstadtfrage

BM Dr. Schäuble erläuterte, daß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einstimmung darüber bestehe, daß die Entscheidung über die Hauptstadt des geeinten Deutschlands dem künftigen gesamtdeutschen Gesetzgeber vorbehalten bleiben müsse. Sie sollte nicht durch einen Vertrag der beiden Regierungen geregelt werden, der nur einheitlich angenommen oder abgelehnt werden könne. Der gesamtdeutsche Gesetzgeber könne beauftragt werden, darüber kurzfristig zu entscheiden. MP de Maizièrre vertrat demgegenüber die Auffassung, die Hauptstadtfrage müsse im »Einigungsvertrag« geregelt werden. Für Berlin als Hauptstadt des geeinten Deutschlands sprächen insbesondere folgende Gesichtspunkte:

Integration der 5 neugebildeten Länder; Einigung Europas mit den Ländern Osteuropas; Hoffnungen und Sehnsüchte der Menschen; Berlin als Hauptstadt Deutschlands sei auch in der Bundesrepublik von Beginn an bis noch vor kurzem nie strittig gewesen; nirgends anders konnte die Teilung und könne die Einigung besser dokumentiert werden als in Berlin.

4.2 Bezeichnung, Fahne, Hymne

Während BM Dr. Schäuble sich für die Beibehaltung von Bezeichnung (»Bundesrepublik Deutschland«), Fahne (schwarz, rot, gold) und Hymne (Deutschlandlied) aussprach, trat MP de Maizièrre dafür ein, über die Bezeichnung »Deutsche Bundesrepublik« nachzudenken. Die Hymne könne als 1. Strophe die – textlich an die Melodie von Haydn angepaßte – DDR-Hymne und als 2. Strophe die 3. Strophe des Deutschlandliedes umfassen.

4.3 Treuhandstelle

¹ Nach Artikel 8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erfassungsgrundsätze) vom 17. Juni 1990 konnte die DDR »durch Verfassungsgesetz Hoheitsrechte auf zwischenstaatliche Einrichtungen und Einricht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tragen oder in die Beschränkung von Hoheitsrechten einwilligen« (GBl. DDR 1990 I, 299f., hier 300)

Zur Frage der Treuhandstelle wies MP de Maizière auf die Notwendigkeit hin, daß die Erträge ausschließlich dem jetzigen DDR-Gebiet zugute kommen müssen. Im übrigen müßten besondere organisatorische Vorkehrungen getroffen werden, um die Belange der Menschen in der DDR zu wahren. In diesem Zusammenhang könne an die Schaffung eines »Aufbauministeriums« oder einer Sonderkonferenz der Ministerpräsidenten der DDR-Länder gedacht werden.

4.4 Änderungen des Grundgesetzes

Nach Auffassung von BM Dr. Schäuble sollten Grundgesetz-Änderung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auf das Notwendige beschränkt werden. Hierzu rechnet er die Änderung der Präambel und von Artikel 23. In der Frage einer Aufhebung des Artikels 146 gebe es unterschiedliche Positionen in Bund und Ländern. Zu Artikel 29, der eine Neugliederung eher verhindere, sollte jedenfalls ein Prüfungsauftrag für die Möglichkeit einer Neugliederung aus Anlaß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rteilt werden. Auch im Hinblick auf die mögliche Verankerung weiterer Staatszielbestimmungen sowie die von den Ländern geforderte Änderung der Vorschriften für die Inanspruchnahme der konkurrierenden Gesetzgebungszuständigkeiten des Bundes könne an einen Prüfungsauftrag gedacht werden.

MP de Maizière sprach sich ebenfalls für eine Änderung der Präambel, in der die Einbettung in Europa zum Ausdruck kommen müsse, sowie die Aufhebung von Artikel 23 aus. Hinsichtlich Artikel 146 sei die Aufhebung bereits von den Außenministerien beider Seiten auf Beamtenebene in die 2+4-Gespräche eingebracht worden.² Bei Artikel 29 sehe die DDR im Hinblick auf ihre fünf Länder keinen Änderungsbedarf. Zur Frage der Aufnahme neuer Staatszielbestimmungen und sozialer Sicherungsrechte als nicht einklagbarer Individualrechte wies MP de Maizière auf die Koalitionsvereinbarungen der DDR³ hin. Danach seien dahingehende Ergänzungen des Grundgesetzes anzustreben. Hierüber müsse in der DDR-Koalition noch gesprochen werden.

5. Einvernehmen über weiteres Verfahren und Zeitplan

Über das weitere Verfahren und den Zeitplan wurde wie folgt Einvernehmen erzielt:

10.-20.7.1990 Fachgespräche der Ressorts;

Einrichtung einer gemeinsamen Arbeitsgruppe »Berlin-Fragen«

Berichte an die jeweiligen Regierungen

1.8.1990 2. Verhandlungsrunde in Berlin;

Ziel: Erstellung eines 1. Vertragsentwurfs

ab 6.8.1990 Ggf. weitere Abstimmungen auf Fachebene

bis 24.8.1990 Gemeinsamer Zwischenbericht an die Gesamtdelegationen

ab 27. 8. 1990 3. Verhandlungsrunde in Bonn

6. Einvernehmen über Verhandlungsthemen

Es wurde Einvernehmen über den als Anlage beigefügten »Katalog von Verhandlungsthemen zum Vertrag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 für die weiteren Verhandlungen erzielt.⁴

² Nr. 285.

³ Nr. 245 Anm.1

⁴ Mit Vorlage vom 9. Juli 1990 berichtete Ministerialdirigent Busse dem Chef des Bundeskanzleramtes, Seifers, die im Ergebnisprotokoll »erwähnte Anlage (Themenkatalog der DDR)« werde »nach noch notwendiger Überarbeitung den Ressorts nachgeschickt« (BK, 132 – 35400 De 12 NA 5 Bd. 2). Der angekündigten, vom 9. Juli datierenden Anlage (7 S.; Nr. 345A) waren – bei durchgehender Paginierung – als Anlage 2 bezeichnete »Richtlinien für die Ressortgespräche über die im Zusammenhang mit einem Beitritt gemäß Artikel 23 Satz 2 Grundgesetz zu treffenden Regelungen« (Wortlaut: Nr. 328B, insbes. Anm. 1-3) sowie die vom Arbeitsstab Deutsche Einheit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erstellte Delegationsliste der Ständigen Teilnehmer der Regierung der DDR an den Verhandlungen zum Einigungsvertrag (Stand: Berlin, 5. Juli 1990) beigefügt

문서 번호 46

독일 통일 실현 조약 (통일 조약) 관련 합의된 협상 주제 목록

1990 년 7 월 9 일

담당자 / 기관: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 귄터 크라우제 정무 차관,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내무부장관, 동독 장관들(내무부, 경제부, 재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 보호, 에너지, 원자력 안전부, 노동사회부, 식품부, 농림부), 루돌프 자이터스 연방 총리실 비서실장, 서독 장관들(외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내독 관계부, 노동사회부), 주정부 총리실 및 시정부 시장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바이에른 주, 함부르크 시, 바덴-뷔템베르크 주, 니더작센 주, 베를린 시, 유럽 공동체 위원회

내용:

이 문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23 조를 근거로 동독지역이 서독 연방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후 가입과 관련하여 동서독 정부가 논의하여야 할 주제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다. 통일조약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통일조약의 기본적 구조; 조약의 전문과 대상; 동독 지역에 신설될 5 개 주의 서독 연방 가입; 기본법상 요구되는 개정; 법 통합 및 행정 통합의 제반 원칙;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된 조약들의 처리 문제
- 신설 주를 위한 재건부 설치
- 베를린: 독일의 수도에 관한 기본 결정
- 재정 문제: 동독의 예산 시스템을 서독의 예산 시스템으로 재편
- 신탁관리청
- 유럽 공동체 법 도입과 신설 5 개 주에 대한 과도기 규정의 강제성
- 코메콘(이하 RGW)과 소련, 그리고 기타 코메콘 회원 국가들과 동독이 체결한 경제 조약의 처리를 위한 법적 규정
- 국제법상의 조약: 서독과 동독이 각각 국제법상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필요에 따라 조정
- 안보 정책상의 문제점(2+4 협상의 결과들)
- 대학, 학교, 교육, 문화: 주 정부 헌법과 주 정부 입법이 마련 될 때까지 과도기 규정을 적용

• 동독 지역의 소수 민족 권리 보호

출처: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 통일. 1989/1990 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Abgestimmter Katalog der Verhandlungsthemen zum Vertrag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

Ausfertigung: Berlin, 9. Juli 1990.

1. Grundsatzfragen zum Beitritt nach Artikel 23

1.1. Grundsätzliche Struktur des Vertrages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1.2. Präambel und Gegenstand des Vertrages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1.3. Der Beitritt der fünf Länder zur Bundesrepublik

– Bei Nichtbeendigung der 2+4-Verhandlungen bis zum Abschluß des Einigungsvertrages ist eine Vorbehaltsklausel hinsichtlich Berlins in den Vertrag aufzunehmen.

– Die Inkraftsetzung des Grundgesetzes in den fünf Ländern und Berlins als Ganzes. Die Einbeziehung von Berlin-Ost (Land Berlin aus 23 Stadtbezirken).

– Vorschläge zur Mitwirkung von Vertretern aus den fünf neugebildeten Ländern in der EG.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Ministerium des Innern

Ministerium für Regionale und Kommunale Angelegenheiten

1.4. Fragen des Grundgesetzes

– Erforderliche Änderungen des Grundgesetzes

(Präambel, Art. 23 und gegebenenfalls Art. 29 sowie andere)

– Übergangsregelung bei der Ausdehnung des Grundgesetzes, z.B. Finanzverfassung

– Ausnahmen, z.B. Wehrverfassung

– Regelung hinsichtlich Zivildienst und Wehrdienst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zuständige Ressorts

1.5. Prinzipien der Rechts- und Verwaltungsangleichung

– Die Überleitung von Bundesrecht

– Die weitere Wirkung von gegenwärtigem DDR-Recht

– Übergangsregelungen bis zur Schaffung des Rechtes in den Ländern

– Erstreckung des Berliner Landesrechts auf Berlin-Ost

Verantwortlich:

Ministerium der Justiz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

alle Ministerien in Zusammenarbeit mit dem Ministerium der Justiz und dem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

Oberbürgermeister von Berlin

– Die Organisation der Verwaltung auf Bundesebene und auf der Ebene der fünf neugebildeten Länder unter anderem:

Der öffentliche Dienst

Die öffentliche Sicherheit

Die Rechtspflege

Das Asylrecht und das Asylverfahrensgesetz

Das Kriegsfolgenrecht und Aufnahme von Aussiedlern

Verantwortlich:

Ministerium des Innern

Ministerium der Justiz
zuständige Ressorts

Die »Richtlinien für die Ressortgespräche über die im Zusammenhang mit einem Beitritt gemäß Artikel 23 Satz 2 GG zu treffenden Regelungen«¹ finden Anwendung.

1.6. Das Schicksal von Verträgen, die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abgeschlossen wurden.

a) Verträge, die vor dem 18. 03. abgeschlossen wurden,

b) Verträge, die nach dem 18. 03. abgeschlossen wurden, insbesondere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vorrangig 1. Staatsvertrag²).

c) Der Schutz der Vereinbarungen zum Eigentum;

Umsetzung der »Gemeinsamen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m 15. Juni 1990³ in rechtliche Regelungen

Verantwortlich: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 in Abstimmung mit dem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2. Die Schaffung eines Aufbauministeriums für die fünf neugebildeten Länder (Alternative Bezeichnungen: 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Wirtschaftskooperation oder Ministerium für Länderentwicklung) und/oder einer von den fünf neugebildeten Ländern getragenen Organisationsform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zuständige Ministerien

3. Berlin

3.1. Grundsatzentscheidung über die deutsche Hauptstadt

3.2. Rechtliche Besonderheiten bei Überleitungsgesetzen für das Land Berlin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Ministerium des Innern
Ministerium der Finanzen
Oberbürgermeister von Berlin

4. Finanzfragen

4.1. Eingliederung des Haushaltssystems der DDR in das Haushaltssystem der Bundesrepublik

4.2. Anwendung der Finanzverfassung

4.3. Bedingungen und Zeiträume für die volle Vereinheitlichung des Steuer- und Zollrechtes

4.4. Die finanzielle Förderung der fünf neugebildeten Länder und von Berlin Verantwortlich:

• Ministerium der Finanzen

5. Die Treuhandanstalt

Verantwortlich: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Ministerpräsidenten
Ministerium für Wirtschaft

¹Anm. 4.

²Nr. 283 Anm.1.

³Nr. 328A Anm. 3

Ministerium der Finanzen

6. Die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6.1. Zwingend zu übernehmendes EG-Recht (EG- Vertragsrecht, Verordnungsrecht der EG, Richtlinien der EG)

6.2. Übergangsregelungen für die fünf neugebildeten Länder

6.3. EG-Zuständigkeiten und Regelungen, die das Verhältnis zum RGW betreffen

Verantwortlich:

Ministerium für Wirtschaft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 und Forstwirtschaft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Ministerium der Justiz

Ministerium der Finanzen

Amt für den Rechtsschutz des Vermögens der DDR

7. Rechtliche Regelung zur Gestaltung der Wirtschaftsbeziehungen mit dem RGW, der UdSSR und anderen RGW-Ländern

– Klärung des Verhältnisses zum RGW und seinen Institutionen

– Vertrauensschutz aus wirtschaftlicher Sicht

Verantwortlich:

Ministerium für Wirtschaft

Ministerium der Finanzen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8. Völkerrechtliche Verträge

8.1. Erforderliche Anpassungen der völkerrechtlichen Verträge, die die BRD abgeschlossen hat

8.2. Klärung der Fortgeltung der von der DDR abgeschlossenen völkerrechtlichen Verträge und der Solidarverpflichtungen

Verantwortlich: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Ministerium für Wirtschaft

9. Sicherheitspolitische Fragen (Ergebnisse der 2+4-Verhandlungen)

Vorbehalt im Staatsvertrag; nach folgender Einigung

Protokollerklärung.

Verantwortlich: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Ministerium für Abrüstung und Verteidigung

10. Universität, Schule, Bildung, Kultur

10.1. Übergangsregelungen für Schulen und Hochschulen bis zur Schaffung der Landesverfassung und Landesgesetzgebung

10.2. Anerkennung und Gleichstellung von Schulabschlüssen und akademischen Graden

10.3. Vereinheitlichung der Berufsbezeichnungen, insbesondere für staatlich anerkannte Berufe

10.4. Maßnahmen der Kulturförderung in den fünf Ländern. Übergangsregelungen für die Zeit bis zur Schaffung von Landesverfassungen und Landesgesetzen

Verantwortlich: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Ministerium für Kultur

11. Die Rechte des sorbischen Volkes

Verantwortlich:

Ministerium des Innern

Ministerium für Regionale und Kommunale Angelegenheiten

문서 번호 47

저축금고의 영업에 관한 지침 - 저축금고지침

1990 년 7 월 26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

이 지침은 저축금고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크레디트차입, 저축금고 자산의 투자 (예를 들어 신용기관 또는 부동산), 서비스와 기타 업무 (주식거래, 외환거래, 금고의 대여) 등을 규정한다. 이 지침의 부록에는 저축금고 회칙의 견본이 수록되어 있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5-1279, Ausgabetag 30.08.1990

**Anordnung
über den Betrieb und die Geschäfte
der Sparkassen (Sparkassenanordnung)**

vom 26. Juli 1990

I.

**Zuständigkeit des Vorstandes der Sparkassen
und des Kreditausschusses im Kreditgeschäft**

§ 1

Vorstand

(1) Der Vorstand entscheidet über alle Sparkassengeschäfte, soweit nicht der Verwaltungsrat oder der Kreditausschuß der Sparkasse zuständig ist. Er kann in den Fällen, in denen der Kreditausschuß zuständig ist, Kontoüberziehungen, Kreditschreitungen, Wechselankäufe und Avalübernahmen über die Grenzen des § 2 Abs. 1 hinaus im Einzelfall bis zu 2 % der Bemessungsgrundlage zulassen.

(2) Der Vorstand hat dem Kreditausschuß nach Maßgabe der vom Verwaltungsrat zu erlassenden Geschäftsanweisung Auskunft über die von ihm in eigener Zuständigkeit bewilligten oder abgelehnten Kredite zu erteilen.

§ 2

Kreditausschuß

(1) Der Kreditausschuß ist für die Zustimmung zu folgenden vom Vorstand vorzubereitenden Kreditanträgen, mit Ausnahme der Kreditanträge im Rahmen zentraler Kreditaktionen öffentlicher Stellen, zuständig:

1. Realkredite, soweit der Kredit im Einzelfall 5 % der Bemessungsgrundlage übersteigt, aber nicht für Kredite bis zu DM 400 000,—,
2. Personalkredite, soweit der Kredit an den Kreditnehmer 5 % der Bemessungsgrundlage oder der nicht gesicherte Teil des Kredits 2 % der Bemessungsgrundlage übersteigt, aber nicht für Kredite bis zu DM 200 000,—.

(2) Innerhalb der in Absatz 1 genannten Grenzen kann die Zuständigkeit durch den Verwaltungsrat bei Vorliegen besonderer Gründe in der Geschäftsanweisung abweichend geregelt werden.

(3) Der Kreditausschuß beschließt ferner über Kreditanträge, die ihm vom Vorstand zur Entscheidung vorgelegt werden.

(4) Der Kreditausschuß ist beschlußfähig, wenn der Vorsitzende, die Hälfte seiner weiteren Mitglieder und ein Mitglied des Vorstandes anwesend sind. Beschlüsse werden mit Stimmenmehrheit der anwesenden Mitglieder gefaßt.

II.

**Übertragung von Geschäftsführungs- und
Vertretungsbefugnissen**

§ 3

Geschäftsführung

(1) Der Vorstand kann im Rahmen der Geschäftsanweisung die Ausübung seiner Befugnisse zur Geschäftsführung im begrenzten Umfang auf

- a) einzelne oder mehrere seiner Mitglieder oder Stellvertreter oder
- b) einzelne Mitarbeiter oder
- c) mehrere Mitarbeiter gemeinsam

zur selbständigen Erledigung übertragen; dies gilt nicht für die Entscheidung über Angelegenheiten von grundsätzlicher Bedeutung.

(2) Der Vorsitzende des Vorstandes regelt die Geschäftsverteilung.

§ 4

Vertretung

Der Vorstand kann im Rahmen der Geschäftsanweisung seine Vertretungsbefugnis im begrenzten Umfang auf

- a) einzelne oder mehrere Mitglieder oder Stellvertreter oder
- b) einzelne Mitarbeiter oder
- c) mehrere Mitarbeiter zur gemeinschaftlichen Ausübung oder
- d) Dritte für einzelne Angelegenheiten

übertragen. Besteht der Vorstand aus mehr als zwei Mitgliedern, so können Vollmachten nach Satz 1 Buchstabe d nur von zwei oder mehreren Mitgliedern des Vorstandes gemeinsam erteilt werden.

III.

Einlagen und sonstige Verbindlichkeiten

§ 5

Spareinlagen; Sparkassenbücher

Die Sparkasse nimmt von jedermann Spareinlagen in Höhe von mindestens einer Deutschen Mark an. Spareinlagen sind Einlagen, die durch die Ausfertigung einer Urkunde, insbesondere eines Sparkassenbuches, als solche gekennzeichnet sind.

§ 6

Kraftloserklärung von Sparkassenbüchern

(1) Ist ein Sparkassenbuch abhanden gekommen oder vernichtet, so kann es der Vorstand entweder selbst auf Antrag dessen, der das Recht daraus geltend machen kann, für kraftlos erklären oder den Antragsteller auf das gerichtliche (Aufgebots-) Verfahren verweisen.

(2) Für die Kraftloserklärung durch den Vorstand gelten die nachfolgenden Vorschriften:

1. Der Antragsteller hat den Verlust des Sparkassenbuches und die Tatsachen, aus denen er seine Berechtigung für diesen Antrag herleitet, glaubhaft zu machen. Zur Glaubhaftmachung können auch rechtswirksame Versicherungen gegenüber dem Vorstand abgegeben werden.
2. Der Vorstand ordnet die Sperre des Guthabens an und erläßt ein Aufgebot.
3. Das Aufgebot hat zu enthalten:
 - a) die Bezeichnung des Sparkassenbuches durch Angabe der Kontonummer,
 - b) die Aufforderung an den Inhaber des Sparkassenbuches, binnen drei Monaten seine Rechte unter Vorlegung des Sparkassenbuches anzumelden; anderenfalls werde das Sparkassenbuch für kraftlos erklärt.
4. Das Aufgebot ist für die Dauer von zwei Wochen bei der Hauptstelle der Sparkasse und gegebenenfalls der kontoführenden Zweigstelle auszuhändigen und in einem für die Bekanntmachung der Sparkasse bestimmten Blatt zu veröffentlichen.
5. Meldet der Inhaber des Sparkassenbuches seine Rechte unter Vorlegung des Sparkassenbuches an, so hat der Vorstand den Antragsteller hiervon unter Benennung des Inhabers zu benachrichtigen und ihm die Einsicht in das Sparkassenbuch innerhalb einer zu bestimmenden Frist zu gestatten. Hat der Antragsteller in das Sparkassenbuch eingesehen oder ist die Frist verstrichen, so ist die Sperre aufzuheben.
6. Wird das Sparkassenbuch nicht vorgelegt, so ist es durch Beschluß des Vorstandes für kraftlos zu erklären. Der Beschluß ist entsprechend Ziffer 4 auszuhängen und zu veröffentlichen.

7. Anstelle des für kraftlos erklärten Sparkassenbuches ist dem Antragsteller ein neues Sparkassenbuch auszustellen.
8. Der Beschluß des Vorstandes, durch den das Sparkassenbuch für kraftlos erklärt wird, kann nur durch gerichtliche Klage angefochten werden.
9. Die Kosten des Aufgebotsverfahrens sowie die Auslage hat der Antragsteller zu tragen.

§ 7

Sonstige Einlagen

Die Sparkasse kann Sicht- und Termineinlagen, auch in ausländischer Währung, entgegennehmen. Bei der Entgegennahme von Einlagen in ausländischer Währung ist das Währungsrisiko auszuschließen, soweit der Gesamtbetrag dieser Einlagen 1 % der Bemessungsgrundlage übersteigt.

§ 8

Schuldverschreibungen

(1) Die Sparkasse kann Namensschuldverschreibungen unter der Bezeichnung „Sparkassenbrief“ ausgeben; der Sparkassenbrief muß auf einen festen Betrag in Deutscher Mark lauten.

(2) Die Sparkasse kann Orderschuldverschreibungen unter der Bezeichnung „Sparkassenobligation“ ausgeben. Absatz 1 Satz 2 gilt entsprechend.

(3) Die Sparkasse kan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ausgeben; Absatz 1 Satz 2 gilt entsprechend.

(4) Die Sparkasse kann mit Zustimmung der Vertretung des Gewährträgers Genußrechte in verbriefter Form (Genußscheine) als Namens-, Order- oder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ausgeben; Absatz 1 Satz 2 gilt entsprechend.

§ 9

Kreditaufnahme

(1) Die Sparkasse kann Kredite in Deutscher Mark bei der vom Sparkassenverband für zuständig erklärten Girozentrale sowie bei der zuständigen Landeszentralbank aufnehmen.

(2) Die Sparkasse kann des weiteren

1. Wechsel ausstellen und annehmen,
2. Bürgschaften übernehmen,
3. Gewährverträge und Rechtsgeschäfte, die wirtschaftlich Gewährverträgen gleichkommen, eingehen.

IV.

Anlage der Sparkassenbestände

§ 10

Allgemeines

Die Sparkasse kann ihre Mittel anlegen

1. in Personalkrediten,
2. in Realkrediten,
3. in Körperschaftskrediten,
4. bei Kreditinstituten,
5. in Geldmarktpapieren und Handelswechseln und Wertpapieren,
6. in Grundstücken und grundstücksgleichen Rechten,
7. in Beteiligungen.

§ 11

Gesicherter Personalkredit

(1) Die Sparkasse kann Personalkredite gegen Sicherheiten gewähren.

(2) Die oberste Sparkassenaufsichtsbehörde setzt die nach Absatz 1 anerkannten Sicherheiten und deren Beleihungswerte durch Erlaß fest.

§ 12

Blankokredite

(1) Die Sparkasse kann Kredite ohne die in § 11 Absatz 2 fest bezeichneten Sicherheiten nach § 11 nur aufgrund eines einstimmigen Beschlusses ihrer zuständigen Stellen gewähren.

(2) Der Gesamtbetrag dieser Kredite darf das Fünffache der Bemessungsgrundlage nicht übersteigen.

§ 13

Personalkreditgrenzen

(1) Die Sparkasse kann einem Kreditnehmer Personalkredite bis zu 25 % der Bemessungsgrundlage gewähren.

(2) Im Sinne des Absatzes 1 gelten als ein Kreditnehmer

- a) alle Unternehmen, die demselben Konzern angehören oder durch Verträge derart verbunden sind, daß das eine Unternehmen verpflichtet ist, seinen ganzen Gewinn an ein anderes Unternehmen abzuführen;
- b) in Mehrheitsbesitz stehende Unternehmen mit den an ihnen mit Mehrheit beteiligten Unternehmen oder Personen, ausgenommen öffentlich-rechtliche Körperschaften sowie Sondervermögen;
- c)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und ihre persönlich haftenden Gesellschafter;
- d) Personen und Unternehmen, für deren Rechnung Kredit aufgenommen wird, mit demjenigen, der den Kredit im eigenen Namen aufnimmt.

(3) Auf die Grenze des Absatzes 1 werden Kredite im Rahmen zentraler Kreditaktionen öffentlicher Stellen, soweit die Sparkasse keine Haftung übernimmt, nicht angerechnet.

§ 14

Realkredit

Darlehen können gegen Grundpfandrechte oder Schiffshypotheken gewährt werden. Die Beleihung darf die ersten drei Fünftel des Wertes des Grundstückes, Schiffes- oder Schiffsbauwerks nicht übersteigen. Der bei der Beleihung angenommene Wert des Grundstückes darf den durch sorgfältige Ermittlung festgestellten Verkehrswert nicht übersteigen. Bei der Feststellung dieses Wertes sind nur die dauernden Eigenschaften des Beleihungsobjekts und der Ertrag zu berücksichtigen, welchen dieses Grundstück bei ordnungsgemäßer Wirtschaft jedem Besitzer nachhaltig gewähren kann. Im übrigen sind die nach Anhörung des Sparkassenverbandes von der obersten Sparkassenaufsichtsbehörde zu erlassenden Beleihungsgrundsätze anzuwenden.

§ 15

Körperschaftskredit

(1) Die Sparkasse kann

1.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kommunalen Eigengesellschaften ohne Sicherheiten,
2. anderen Kreditnehmern gegen Bürgschaft, Garantie oder sonstige Gewährleistungen einer Körperschaft od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Kredit gewähren. Die eventuell erforderliche Genehmigung der für den Kreditnehmer zuständigen Sparkassenaufsichtsbehörde ist nachzuweisen.

(2) Der Gesamtbetrag der nach Absatz 1 gewährten Kredite darf insgesamt das 6fache, soweit es sich um langfristige Kredite handelt, das 4fache der Bemessungsgrundlage nicht

übersteigen. Dies gilt nicht für Kredite im Rahmen zentraler Kreditaktionen öffentlicher Stellen, soweit die Sparkasse keine Haftung übernimmt, und für Kredite aus eingegangenen Verbindlichkeiten mit mindestens gleicher Laufzeit. In den Gesamtbetrag wird der Bestand an Schuldverschreibungen und an Schuldscheinforderungen kommunaler Gebietskörperschaften eingerechnet.

§ 16

Anlage bei Kreditinstituten

Die Sparkasse hat verfügbare Gelder bei der vom Sparkassenverband für zuständig erklärten Girozentrale sowie bei der zuständigen Landeszentralbank anzulegen.

§ 17

Anlage in Geldmarktpapieren, Handelswechseln, Forderungen und Wertpapieren

Die Sparkasse kann verfügbare Gelder anlegen in

1. bundesbankfähigen Schatzwechseln und Schatzanweisungen oder
2. Wechseln, die
 - a) als Privatkonten gehandelt werden oder
 - b) gute Handelswechsel sind, die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dem Tag des Ankaufs fällig sind und die Unterschriften von mindestens zwei kreditwürdigen Verpflichteten tragen und bei denen ein anderes Kreditinstitut mit Sitz in Deutschland wechselmäßig haftet;
3. mündelsicheren Inhaber-, Order-, Namensschuldverschreibungen, Schuldschein- und Schuldbuchforderungen sowie Genußrechten, deren Schuldner eine 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utschland ist; der Erwerb von Schuldverschreibungen und Genußrechten, die von anderen Sparkassen ausgegeben worden sind, ist nicht zulässig;
4. Anteilscheinen von in Deutschland zugelassenen Kapitalanlagegesellschaften; Anteilscheine über Anteile an geschlossenen Immobilienfonds dürfen nur erworben werden, wenn sie von einer Girozentrale oder einer öffentlichen Sparkasse als Treuhandkommanditist oder von einem Unternehmen in der Rechtsform der Aktiengesellschaft oder der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dessen Grundkapital oder Stammkapital sich mindestens zu $\frac{1}{4}$ im Besitz einer Girozentrale oder einer öffentlichen Sparkasse befindet, ausgegeben worden sind; der Gesamtbetrag der Anlage in Anteilscheinen darf 75 % der Bemessungsgrundlage nicht übersteigen;
5. anderen Wertpapieren, soweit diese von der obersten Sparkassenaufsichtsbehörde für geeignet erklärt worden sind;
6. Aktien und sonstigen Wertpapieren, die nicht unter die Absätze 1–3 fallen und die an einer deutschen Wertpapierbörse zum amtlichen Handel oder zum geregelten Markt zugelassen sind, bis zur Höhe von 50 % der Bemessungsgrundlage; die Anlage in Aktien einer Gesellschaft darf 10 % der Bemessungsgrundlage und 5 % des Grundkapitals der Gesellschaft nicht übersteigen.

§ 18

Anlage in Immobilien

(1) Die Sparkasse kann ihre Mittel in Grundstücken, Wohnungseigentum, Teileigentum und Erbbaurechten im Geschäftsgebiet anlegen.

(2) Die Sparkasse kann Grundstücke auch außerhalb des Geschäftsgebiets zur Vermeidung von Verlusten freihändig oder im Wege der Zwangsversteigerung erwerben.

§ 19

Beteiligungen

Die Sparkasse kann sich an Einrichtungen der Sparkassenorganisation beteiligen.

§ 20

Übernahme von Verpflichtungen

(1) Die Sparkasse kann Bürgschaften, Garantien und sonstige Gewährleistungen übernehmen, kann Wechsel ausstellen und annehmen sowie andere Sicherheiten für fremde Verbindlichkeiten bestellen.

(2) Für die Übernahme von Verpflichtungen nach Absatz 1 gelten die §§ 11–13 entsprechend. Die Verpflichtungen nach Absatz 1 werden auf die Grenzen gemäß §§ 12 Absatz 2, 13 Absatz 1 zur Hälfte, Verpflichtungen für Kredite aus Gelddarlehen aller Art, entgeltlich erworbene Geldforderungen, Akzeptkredite sowie Forderungen aus Namensschuldverschreibungen mit Ausnahme der auf den Namen lautenden Kommunalschuldverschreibungen, der Diskontierung von Wechseln und Schecks sowie Geldforderungen aus sonstigen Handelsgeschäften eines Kreditinstituts in voller Höhe anzurechnet.

§ 21

Bargeldloser Zahlungsverkehr

(1) Die Sparkasse betreibt und fördert den bargeldlosen Zahlungsverkehr.

(2) Die Sparkasse kann Verrechnungskonten bei Kreditinstituten im In- und Ausland in Deutscher Mark oder in ausländischer Währung unterhalten.

V.

Dienstleistungsgeschäfte und andere Geschäfte

§ 22

Dienstleistungsgeschäfte

Die Sparkasse kann folgende Dienstleistungsgeschäfte betreiben und soll sich hierbei der vom Sparkassenverband für zuständig erklärten Verbundunternehmen bedienen:

1. An- und Verkauf von Wertpapieren
 - a) für fremde Rechnung; beim Kauf muß eine satzungsmäßige, ausreichende Deckung vorhanden sein, beim Verkauf müssen die Wertpapiere vorher geliefert sein;
 - b) für eigene Rechnung, soweit dies zur Befriedigung des Kundenbedarfs erforderlich ist;
2. An- und Verkauf von ausländischen Zahlungsmitteln, von Wechseln und Schecks, auch soweit sie im Ausland zahlbar sind, und von Forderungen in ausländischer Währung, Noten, Sorten, Wechseln, Schecks, Reiseschecks o. ä., Münzen, Medaillen und Edelmetallen;
 - a) für fremde Rechnung; die Bestimmung in Ziffer 1 Buchstabe a) zweiter Halbsatz gilt entsprechend;
 - b) für eigene Rechnung, soweit dies für Wechselstubengeschäfte und zur Befriedigung des Kundenbedarfs erforderlich ist;
3. Verwahrung und Verwaltung von Wertpapieren sowie sonstigen Wertgegenständen und Urkunden aller Art;
4. Vermietung von Schließfächern und Aufbewahrung von verschlossenen Depots;
5. Einziehung von Forderungen aller Art, insbesondere von Schecks und Wechseln einschließlich der in diesem Rahmen erforderlichen Indossierung; soweit es sich um Wechsel und Schecks handelt, die an ausländischen Plätzen zahlbar sind oder die auf ausländische Währung lauten, sollen diese nur an Unternehmen der Sparkassenorganisation zum Einzug weitergegeben werden;

6. Aufnahme von Hypothekenurkunden, Frachtbriefen und von sonstigen Dokumenten;
7. Dienstleistungen einschließlich der Vermittlung von Verträgen für die zuständige öffentliche Bausparkasse, die zuständigen öffentlichen Versicherungsunternehmen und sonstige Einrichtungen der Sparkassenorganisation;
8. Verwaltung und Weiterleitung fremder Mittel unter treuhänderischer Haftung;
9. Übernahme von Vermögensverwaltungen.

§ 23

Bemessungsgrundlage

Bemessungsgrundlage ist das nach dem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erkannte haftende Eigenkapital.

VI.

Ausnahmen

§ 24

Ausnahmegenehmigungen

Soweit die Erfüllung der Sparkassenaufgaben nicht gefährdet wird, können Ausnahmen von den Vorschriften der Abschnitte III bis V dieser Regelung nach Anhörung des Sparkassenverbandes unbeschadet der Wirksamkeit des Rechtsgeschäfts

- a) von der obersten Sparkassenaufsichtsbehörde allgemein,
- b) von der Sparkassenaufsichtsbehörde im Einzelfall erteilt werden.

§ 25

Mustersatzung

Die Mustersatzung der Sparkassen (Anlage) wird hiermit bestätigt.

§ 26

Inkrafttreten

Diese Anordnung tritt am Tage nach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Berlin, den 26. Juli 1990

Der Minister der Finanzen

Dr. Romberg

Anlage

zu vorstehender Anordnung

Mustersatzung der Sparkassen

Auf Grund des § 4 Abs. 3 des Gesetzes über den Status und die Organisation der Sparkassen (Sparkassengesetz) vom 29. Juni 1990 (GBl. I Nr. 40 S. 567) wird im Einvernehmen mit dem Minister für die regionalen und territorialen Angelegenheiten folgende Mustersatzung erlassen:

§ 1

Name und Sitz

(1) Die (Sparkasse) mit dem Sitz in ist eine gemeinnützige, rechtsfähige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Sie führt ihre Geschäfte nach wirtschaftlichen Grundsätzen unter Wahrung der Gemeinnützigkeit. Die Erzielung von Gewinn ist nicht Hauptzweck des Geschäftsbetriebes. Die Sparkasse führt ein Siegel mit dem Namen und dem Wappen des/der (Name des Gewährträgers).

(2) Im Geschäftsverkehr kann die Sparkasse die Kurzbezeichnung führen.

(3) Die Sparkasse ist Mitglied des Sparkassenverbandes.

§ 2

Haftung des Gewährträgers und Anstaltslast

(1) Gewährträger der Sparkasse ist

(2) Der Gewährträger haftet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r Sparkasse unbeschränkt. Die Gläubiger der Sparkasse können den Gewährträger nur in Anspruch nehmen, soweit sie aus dem Vermögen der Sparkasse nicht befriedigt werden.

(3) Der Gewährträger stellt sicher, daß die Sparkasse ihre Aufgaben erfüllen kann (Anstaltslast).

§ 3

Organe

Organe sind

- a) der Verwaltungsrat,
- b) der Vorstand.

§ 4

Verwaltungsrat

(1) Der Verwaltungsrat besteht aus:

- a) dem Vorsitzenden und
- b) sachkundigen Mitgliedern.

(2) Der Vorsitzende beruft den Verwaltungsrat ein und leitet die Sitzungen.

(3) Der Verwaltungsrat ist bei Bedarf, mindestens jedoch viermal im Jahr unter Einhaltung einer Einladungsfrist von 8 Tagen und Mitteilung der Tagesordnung einzuberufen. Der Vorsitzende muß den Verwaltungsrat binnen angemessener Frist einberufen, wenn die Hälfte der Mitglieder des Verwaltungsrates, der Vorstand oder die Mitglieder des Kreditausschusses es unter Angabe des Gegenstandes der Beratung beantragen.

(4) Soweit ein Mitglied des Verwaltungsrates nach § 18 des Sparkassengesetzes bei der Beratung und Beschlussfassung über bestimmte Angelegenheiten nicht mitwirken darf, hat es das Beratungszimmer während der Behandlung dieser Angelegenheit zu verlassen.

(5) Über das Ergebnis der Sitzung des Verwaltungsrates ist eine Niederschrift zu fertigen, die vom Vorsitzenden und einem weiteren Mitglied zu unterzeichnen ist.

§ 5

Vorstand

Der Vorstand besteht aus Personen und Stellvertreter(n).

§ 6

Kreditausschuß

(1) Der Kreditausschuß besteht aus

- a) dem Vorsitzenden,
- b) weiteren Mitgliedern,
- c) den Mitgliedern des Vorstandes.

(2) Der Kreditausschuß ist vom Vorsitzenden einzuberufen, so oft es die Geschäfte erfordern.

(3) § 4 Absatz 4 und 5 gelten entsprechend.

§ 7

Bekanntmachungen der Sparkasse

(1) Bekanntmachungen der Sparkasse sind in (Zeitungen oder Amtsblättern) zu veröffentlichen. Aufgebots- und Kraftloserklärungen von Sparkassenbüchern sind in (Zeitung oder Amtsblatt) bekanntzumachen.

(2) Bekanntmachungen sind außerdem in den Kassenräumen der Sparkasse auszuhängen.

§ 8

Öffentliches Auslegen der Satzung

Die Satzung in ihrer jeweils geltenden Fassung ist in den Kassenräumen der Sparkasse auszulegen.

Anordnung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für Wechsel

vom 31. Juli 1990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für Wechsel wird folgendes angeordnet:

§ 1

Soweit für die Aushändigung von Wechseln, Wechselabschriften oder wechselähnlichen Urkund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schließlich Berlin (West) die volle Wechselsteuer gemäß § 8 Abs. 1 Wechselsteuergesetz — WStG — vom 22. Juni 1990 (Sonderdruck Nr. 1429 des Gesetzblattes) entstanden und entrichtet worden ist, gilt sie auch für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ls entrichtet.

§ 2

Wurde nur die ermäßigte Steuer gemäß § 8 Abs. 2 WStG erhoben, so ist der an der vollen Wechselsteuer fehlende Betrag nachzuentrichten, sowei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r Anspruch auf die volle Wechselsteuer entstanden ist.

§ 3

Diese Maßnahmen gelten für Tatbestände, für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dem 30. Juni 1990 Wechselsteuer entrichtet werden muß.

§ 4

Diese Anordnung tritt mit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Berlin, den 31. Juli 1990

Der Minister der Finanzen

Dr. Romberg

An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 (Apothekenbetriebsordnung — ApBetrO)

vom 6. August 1990

Auf Grund des § 18 der Verordnung vom 1. August 1990 über das Apothekenwesen (GBl. I Nr. 55 S. 1236) wird folgendes angeordnet:

Erster Abschnitt

Allgemeine Bestimmung

§ 1

Anwendungsbereich

(1) Diese Anordnung findet Anwendung auf den Betrieb und die Einrichtung von öffentlichen Apotheken einschließlich der Apotheken, die gemäß § 14 Abs. 5 der Verordnung über das Apothekenwesen ein Krankenhaus mit Arzneimitteln versorgen (Krankenhausversorgende Apotheken), Zweig- und Notapotheken sowie von Krankenhausapotheken.

(2) Diese Anordnung findet auf den Apothekenbetrieb insoweit keine Anwendung, als eine Erlaubnis als Hersteller von Arzneimitteln erteilt worden ist.

Zweiter Abschnitt

Der Betrieb von öffentlichen Apotheken

§ 2

Apothekenleiter

(1) Apothekenleiter ist

1. bei einer Apotheke, die nach § 1 Abs. 2 der Verordnung über das Apothekenwesen betrieben wird, der Inhaber der Erlaubnis, im Falle der Verpachtung, der Pächter,
2. bei einer Apotheke oder Zweigapotheke, die nach §§ 13 oder 20 der Verordnung über das Apothekenwesen verwaltet wird, der Inhaber der Genehmigung,
3. bei einer Apotheke, die nach § 17 der Verordnung über das Apothekenwesen betrieben wird, der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angestellte und mit der Leitung beauftragte Apotheker.

(2) Der Apothekenleiter hat die Apotheke persönlich zu leiten. Er ist dafür verantwortlich, daß die Apotheke unter Beachtung der geltenden Vorschriften betrieben wird.

(3) Der Apothekenleiter hat jede berufliche Tätigkeit, die er neben seiner Tätigkeit als Apothekenleiter ausübt, vor ihrer Aufnahme der zuständigen Behörde anzuzeigen.

(4) Der Apothekenleiter darf die in § 25 genannten Waren in der Apotheke nur in einem Umfang anbieten oder feilhalten, der den ordnungsgemäßen Betrieb der Apotheke nicht beeinträchtigt.

(5) Der Apothekenleiter muß sich, sofern er seine Verpflichtung zur persönlichen Leitung der Apotheke vorübergehend nicht selbst wahrnimmt, durch einen Apotheker vertreten lassen. Die Vertretung darf insgesamt drei Monate im Jahr nicht überschreiten.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Vertretung über diese Zeit hinaus zulassen, wenn ein in der Person des Apothekenleiters liegender wichtiger Grund gegeben ist.

문서 번호 48

어음에 대한 이중과세 제한에 관한 규정

1990 년 7 월 31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재무부 장관 발터 롬베르크

내용:

이 지침은 어음거래에 대한 세금규정이다. 동독에서도 1990 년 6 월 30 일 이후에는 어음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1990, Nr. 56, S. 1279, Ausgabetag 30.08.1990

(2) Der Kreditausschuß ist vom Vorsitzenden einzuberufen, so oft es die Geschäfte erfordern.

(3) § 4 Absatz 4 und 5 gelten entsprechend.

§ 7

Bekanntmachungen der Sparkasse

(1) Bekanntmachungen der Sparkasse sind in (Zeitungen oder Amtsblättern) zu veröffentlichen. Aufgebots- und Kraftloserklärungen von Sparkassenbüchern sind in (Zeitung oder Amtsblatt) bekanntzumachen.

(2) Bekanntmachungen sind außerdem in den Kassenräumen der Sparkasse auszuhängen.

§ 8

Öffentliches Auslegen der Satzung

Die Satzung in ihrer jeweils geltenden Fassung ist in den Kassenräumen der Sparkasse auszulegen.

Anordnung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für Wechsel

vom 31. Juli 1990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für Wechsel wird folgendes angeordnet:

§ 1

Soweit für die Aushändigung von Wechseln, Wechselabschriften oder wechselähnlichen Urkund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schließlich Berlin (West) die volle Wechselsteuer gemäß § 8 Abs. 1 Wechselsteuergesetz — WStG — vom 22. Juni 1990 (Sonderdruck Nr. 1429 des Gesetzblattes) entstanden und entrichtet worden ist, gilt sie auch für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ls entrichtet.

§ 2

Wurde nur die ermäßigte Steuer gemäß § 8 Abs. 2 WStG erhoben, so ist der an der vollen Wechselsteuer fehlende Betrag nachzuentrichten, sowei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r Anspruch auf die volle Wechselsteuer entstanden ist.

§ 3

Diese Maßnahmen gelten für Tatbestände, für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dem 30. Juni 1990 Wechselsteuer entrichtet werden muß.

§ 4

Diese Anordnung tritt mit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Berlin, den 31. Juli 1990

Der Minister der Finanzen
Dr. Romberg

An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 (Apothekenbetriebsordnung — ApBetrO)

vom 6. August 1990

Auf Grund des § 18 der Verordnung vom 1. August 1990 über das Apothekenwesen (GBl. I Nr. 55 S. 1236) wird folgendes angeordnet:

Erster Abschnitt

Allgemeine Bestimmung

§ 1

Anwendungsbereich

(1) Diese Anordnung findet Anwendung auf den Betrieb und die Einrichtung von öffentlichen Apotheken einschließlich der Apotheken, die gemäß § 14 Abs. 5 der Verordnung über das Apothekenwesen ein Krankenhaus mit Arzneimitteln versorgen (Krankenhausversorgende Apotheken), Zweig- und Notapotheken sowie von Krankenhausapotheken.

(2) Diese Anordnung findet auf den Apothekenbetrieb insoweit keine Anwendung, als eine Erlaubnis als Hersteller von Arzneimitteln erteilt worden ist.

Zweiter Abschnitt

Der Betrieb von öffentlichen Apotheken

§ 2

Apothekenleiter

(1) Apothekenleiter ist

1. bei einer Apotheke, die nach § 1 Abs. 2 der Verordnung über das Apothekenwesen betrieben wird, der Inhaber der Erlaubnis, im Falle der Verpachtung, der Pächter,
2. bei einer Apotheke oder Zweigapotheke, die nach §§ 13 oder 20 der Verordnung über das Apothekenwesen verwaltet wird, der Inhaber der Genehmigung,
3. bei einer Apotheke, die nach § 17 der Verordnung über das Apothekenwesen betrieben wird, der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angestellte und mit der Leitung beauftragte Apotheker.

(2) Der Apothekenleiter hat die Apotheke persönlich zu leiten. Er ist dafür verantwortlich, daß die Apotheke unter Beachtung der geltenden Vorschriften betrieben wird.

(3) Der Apothekenleiter hat jede berufliche Tätigkeit, die er neben seiner Tätigkeit als Apothekenleiter ausübt, vor ihrer Aufnahme der zuständigen Behörde anzuzeigen.

(4) Der Apothekenleiter darf die in § 25 genannten Waren in der Apotheke nur in einem Umfang anbieten oder feilhalten, der den ordnungsgemäßen Betrieb der Apotheke nicht beeinträchtigt.

(5) Der Apothekenleiter muß sich, sofern er seine Verpflichtung zur persönlichen Leitung der Apotheke vorübergehend nicht selbst wahrnimmt, durch einen Apotheker vertreten lassen. Die Vertretung darf insgesamt drei Monate im Jahr nicht überschreiten.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Vertretung über diese Zeit hinaus zulassen, wenn ein in der Person des Apothekenleiters liegender wichtiger Grund gegeben ist.

문서 번호 49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창립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금융과 관련된 법적 명령권을
연방금융감독원에 위임하는 규정

1990 년 9 월 4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신용기금 연방관리청, 독일 연방은행

내용:

이 문서는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용자기관에 대한 감시를 연방관리청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정은 연방 중앙은행에 자문을 구하고 화폐경제사회공동체 조약 28 조 1 항의 조치에 따라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47, S. 1995, Ausgabetag 15.09.1990

Verordnung
zur Übertragung der Befugnis zum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
auf das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nach dem Gesetz zu dem Vertrag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4. September 1990

Auf Grund des Artikels 28 Satz 2 des Gesetzes vom 25. Juni 1990 zu dem Vertrag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GBl. II S. 518) verordnet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 1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wird die Befugnis übertragen, nach Anhörung der Deutschen Bundesbank mit Zustimmung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Rechtsverordnungen nach Maßgabe des Artikels 28 Satz 1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rlassen.

§ 2

(1) Diese Verordnung gilt nach § 14 des Dritten Überleitungsgesetzes in Verbindung mit Artikel 36 des in der Eingangsformel genannten Gesetzes auch im Land Berlin.

(2) Diese Verordnung gilt ferner nach Artikel 3 Satz 1 in Verbindung mit Anlage I Artikel 8 § 5 des in der Eingangsformel genannten Vertrage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schließlich Berlin (Ost).

§ 3

Diese Verordnung tritt am Tage nach der Verkündung in Kraft.

Bonn, den 4. September 1990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문서 번호 50

도이치마르크 도입에 따른 재정결산에 관한 법 (DM-대차대조법)

1990 년 9 월 23 일

담당자 / 기관: 신탁청, 연방법무부, 연방재무부, 연방경제기술부

내용:

이 문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적규정에 따라 동독의 기업과 콤비나트를 전환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1990 년 7 월 1 일에 동독에 거주하였던 모든 상인이 1990 년 7 월 1 일까지 도이치마르크로의 전환에서 소유하게 될 재산시설목록과 재정결산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69-1193, Ausgabetag 28.09.1990
(Gesetz zu dem Vertrag vom 31. August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gesetz] und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D-Markbilanzgesetz - DMBilG)

DMBiG

Ausfertigungsdatum: 23.09.1990

Vollzitat:

"D-Markbilanz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8. Juli 1994 (BGBl. I S. 1842), das zuletzt durch Artikel 12 Absatz 13 des Gesetzes vom 10. November 2006 (BGBl. I S. 2553) geändert worden ist"

Stand: Neugefasst durch Bek. v. 28.7.1994 I 1842,
zuletzt geändert durch Art. 12 Abs. 13 G v. 10.11.2006 I 2553

Fußnote

(+++ Textnachweis ab: 3.10.1990 +++)
(+++ Zur Anwendung vgl. § 60 +++)

Im Beitrittsgebiet fortgeltendes Recht der ehem.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m. Anlage II Kap. III Sachg. D Abschn. I Nr. 1 - geändert durch Art. 5 Nr. 7 EinigVtrVbg v. 18.9.1990 II 1245 - nach Maßgabe d. Art. 9 EinigVtr v. 31.8.1990 iVm Art 1 G v. 23.9.1990 II 885, 1169 mWv 3.10.1990.

Inhaltsübersicht

Abschnitt 1

Inventar. Eröffnungsbilanz. Anhang

Unterabschnitt 1

Inventar. Eröffnungsbilanz

- § 1 Pflicht zur Aufstellung
- § 2 Inventar
- § 3 Inventur
- § 3a Nachholung der Inventur
- § 4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 § 5 Anzuwendende Vorschriften

Unterabschnitt 2

Bilanzansatz- und Bewertungsvorschriften

- § 6 Allgemeine Anforderungen
- § 7 Neubewertung
- § 8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 § 9 Grund und Boden
- § 10 Bauten und andere Anlagen
- § 11 Finanzanlagen
- § 12 Vorräte

- § 13 Forderungen
- § 14 Kassenbestand, Schecks, Guthaben bei Geldinstituten
- § 15 Rechnungsabgrenzungsposten
- § 16 Verbindlichkeiten
- § 17 Rückstellungen
- § 18 Währungsumrechnung

Unterabschnitt 3

Anhang. Vergleichende Darstellung

- § 19 Anhang
- § 20 Vergleichende Darstellung

Abschnitt 2

Konzerneröffnungsbilanz. Gesamteröffnungsbilanz

- § 21 Pflicht zur Aufstellung
- § 22 Konzernanhang
- § 23 Vorlage- und Auskunftspflichten

Abschnitt 3

Kapitalausstattung

Unterabschnitt 4

Vermögensausgleich und Eigenkapitalsicherung von bisher volkseigenen Unternehmen

- § 24 Ausgleichsforderungen
- § 25 Ausgleichsverbindlichkeiten
- § 26 Eigenkapitalsicherung

Unterabschnitt 5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privater Unternehmen

- § 27 Neufestsetzung
- § 28 Vorläufige Neufestsetzung
- § 29 Gesellschaftsrechtliche Beziehungen
- § 30 Auflösung von Kapitalentwertungskonten

Unterabschnitt 6

Vorläufige Gewinnrücklage

- § 31 Vorläufige Gewinnrücklage

Abschnitt 4

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 § 32 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Abschnitt 5

Verfahren

Unterabschnitt 7

Prüfung

- § 33 Prüfung
- § 34 Durchführung der Prüfung

Unterabschnitt 8

Feststellung und Berichtigung

§ 35 Feststellung

§ 36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Unterabschnitt 9

Offenlegung

§ 37 Offenlegung

Abschnitt 6

Geschäftszweigbezogene Vorschriften

Unterabschnitt 10a

Vorschriften fü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 38 Anwendungsbereich

§ 39 Eröffnungsbilanz

§ 40 Ausgleichsforderungen

§ 41 Ausgleichsverbindlichkeiten

§ 42 Vergleichende Darstellung

§ 43 Prüfung

Unterabschnitt 10b

Abführungspflicht fü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 43a Abführungspflicht für wertberichtigte Forderungen

§ 43b Abführungspflicht für wertberichtigte Schulden

§ 43c Fälligkeit

§ 43d Prüfung der Abführung

§ 43e Außenhandelsbetriebe

Unterabschnitt 11

Vorschriften für Versicherungsunternehmen

§ 44 Anwendungsbereich

§ 45 Eröffnungsbilanz

§ 46 Prüfung, Einreichung

Abschnitt 7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Zwangsgelder

§ 47 Strafvorschriften

§ 48 Bußgeldvorschriften

§ 49 Festsetzung von Zwangsgeld

Abschnitt 8

Steuern, Gebühren

§ 50 Steuerliche Eröffnungsbilanz und Folgewirkungen

§ 51 Umstellungsbedingte Vermögensänderungen

§ 52 Steuerliche Ausgangswerte in anderen Fällen

§ 53 Wirtschaftsjahre 1990 und steuerliche Schlußbilanz

§ 54 Pensionsrückstellungen

§ 55 Einlagen

§ 56 Gebühren

Abschnitt 9

Verfahren der Kapitalneufestsetzung. Sonstige Vorschriften

§ 56a Einfache Mehrheit

§ 56b Inhalt der Anmeldung. Prüfung durch das Gericht

§ 56c Umtausch und Zusammenlegung von Anteilen

§ 56d Überschuldung oder Verlust des halben gezeichneten Kapitals

§ 56e Kredite an Treuhandunternehmen

§ 57 Auflösung

§ 58 Geschäftsjahr

Abschnitt 10

Schlußvorschriften

§ 59 Ermächtigung

§ 60 Anwendung

Abschnitt 1

Inventar. Eröffnungsbilanz. Anhang

Unterabschnitt 1

Inventar. Eröffnungsbilanz

§ 1 Pflicht zur Aufstellung

(1) Unternehmen mit Hauptniederlassung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1. Juli 1990, die als Kaufleute nach § 238 des Handelsgesetzbuchs verpflichtet sind, Bücher zu führen, haben ein Inventar und ein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für den 1. Juli 1990 sowie einen Anhang nach § 19 aufzustellen, der mit der Eröffnungsbilanz eine Einheit bildet. Unternehmen, die ihre Eröffnungsbilanz nicht nach § 37 offenlegen müssen, brauchen einen Anhang nicht aufzustellen.

(2) Als Unternehmen, die nach Absatz 1 zur Führung von Büchern verpflichtet sind, gelten auch

1. volkseigene Kombinate, Betriebe, selbständige Einrichtungen und wirtschaftsleitende Organe, zwischenbetriebliche Einrichtungen und sonstige im Register der volkseigenen Wirtschaft eingetragene Wirtschaftseinheiten sowie volkseigene Güter,
2. Aktiengesellschaften im Aufbau,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m Aufbau,
3. Genossenschaften jeder Art einschließlich kooperativer Einrichtungen,
4. Betriebe mit oder ohne eigene Rechtspersönlichkeit des Staates, der Länder, Kreise, Städte und Gemeinden, die ein Handelsgewerbe im Sinne des § 1 des Handelsgesetzbuchs betreiben,
5. Anstalten, Stiftungen und Vereine, die ein Handelsgewerbe im Sinne des § 1 des Handelsgesetzbuchs betreiben,
6. die Deutsche Post,
7. die Deutsche Reichsbahn,
8.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von Unternehmen nach Absatz 1 mit Hauptniederlassung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3) Absatz 1 ist auch auf die Treuhandanstalt und auf in den Absätzen 1 und 2 bezeichnete Unternehmen anzuwenden, die sich in Abwicklung befinden oder über deren Vermögen das Gesamtvollstreckungsverfahren eingeleitet worden ist.

(4) Führt ein zur Rechnungslegung verpflichtetes Unternehmen den Geschäftsbetrieb eines in den Absätzen 1 bis 3 bezeichneten Unternehmens im eigenen oder fremden Namen, aber für fremde Rechnung, so hat es auch dessen Pflichten nach diesem Gesetz zu erfüll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5) Zur Rechnungslegung verpflichtete Unternehmen, die bis 30. Juni 1991 durch Gründung, Umwandlung, Verschmelzung, Spaltung oder Entflechtung entstehen, können für die Zwecke dieses Gesetzes als zum 1. Juli 1990 entstanden angesehen werden; auf Unternehmen, die aus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hervorgegangen sind, ist diese Regelung bis zum 31. Dezember 1991 und auf kommunale Wohnungsunternehmen, auf die Wohnzwecken dienende Grundstücke und sonstiges Wohnungsvermögen von früher volkseigenen Wohnungswirtschaftsbetrieben oder von Kommunen übertragen worden sind, bis zum 31. Dezember 1997 anzuwenden. Führen Maßnahmen nach Satz 1 dazu, daß ein Unternehmen nicht mehr besteht, so braucht dieses Gesetz auf das untergegangene Unternehmen nicht angewendet zu werden. Satz 2 ist auch anzuwenden, wenn das Unternehmen, das eine Rechtsform im Sinne des Absatzes 2 Nr. 1 oder 3 hat, bis 30. Juni 1991 aufgelöst wird und die Fortsetzung des aufgelösten Unternehmens ausgeschlossen ist. Die Frist nach Satz 1 ist gewahrt, wenn das neue Unternehmen oder die neue Rechtsform bis zum Ablauf der Frist ordnungsgemäß zur Eintragung in das zuständige Register angemeldet ist. Sind einer fristgerechten Anmeldung nicht alle erforderlichen Unterlagen beigelegt, gilt die Anmeldung als ordnungsgemäß, wenn diese Unterlagen unverzüglich bei dem für die Anmeldung zuständigen Gericht nachgereicht werden.

§ 2 Inventar

Auf das Inventar zum 1. Juli 1990 ist § 240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In das Inventar sind auch solche Vermögensgegenstände aufzunehmen, die dem Unternehmen nach dem 30. Juni 1990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nach § 4 Abs. 1 Satz 1 für die Eröffnungsbilanz aus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unentgeltlich übertragen werden.

§ 3 Inventur

(1) Für die Aufstellung des Inventars braucht eine Inventur zur mengenmäßigen Erfass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nicht durchgeführt zu werden, wenn bei der Inventur zum 30. Juni 1990 die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vollständig aufgenommen und die in den Absätzen 2 bis 6 enthaltenen Grundsätze beachtet worden sind. Die erst nach dem 30. Juni 1990 erworb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die nach § 2 Satz 2 oder nach § 4 Abs. 3 in das Inventar aufzunehmen sind, sind in die Inventur einzubeziehen oder gesondert aufzunehmen. War der Prüfer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 33 Abs. 1) bei der Inventur nicht anwesend, kann auf eine neue Inventur nur verzichtet werden, wenn der Prüfer die Ordnungsmäßigkeit der Inventur zum 30. Juni 1990 anerkennt.

(2) Die Vermögensgegenstände sind grundsätzlich körperlich zu erfassen. § 241 des Handelsgesetzbuchs darf angewandt werden, Absatz 3 Nr. 1 mit der Maßgabe, daß das Inventar in den ersten vier Monaten des Geschäftsjahrs aufgestellt werden kann. Die körperliche Bestandsaufnahme kann bei den Vermögensgegenständen des Anlagevermögens unterbleiben, wenn diese in einer den Grundsätzen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ntsprechenden Weise verzeichnet sind und in den letzten zwölf Monaten eine körperliche Aufnahme stattgefunden hat.

(3) Bei Grundstücken und Gebäuden sind alle gesetzlichen oder vertraglichen Einschränkungen zu erfassen, die sich auf deren Nutzung, Verfügbarkeit oder Verwertung beziehen; es sind außerdem alle bekannten Sachverhalte festzuhalten, aus denen sich finanzielle Verpflichtungen ergeben können.

(4)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in besonderen Listen zu erfassen und in einer den Grundsätzen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ntsprechenden Art und Weise nachzuweis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Staat, der Treuhandanstalt, Gesellschaftern und Tochterunternehmen (§ 21 Abs. 1 Satz 1) sind gesondert zu erfassen; der Rechtsgrund ist jeweils anzugeben. Bei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ist der Grund für die Kreditgewährung anzugeben.

(5) In besonderen Listen sind alle Sachverhalte zu erfassen, die zu einer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für ungewisse Verbindlichkeiten oder für drohende Verluste aus schwebenden Geschäften führen können oder für die Rückstellungen nach § 249 Abs. 1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zu bilden sind.

(6) In besonderen Listen sind alle Haftungsverhältnisse, die nach § 251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erken sind, und alle sonstigen finanziellen Verpflichtungen zu erfassen, über die nach § 19 Abs. 3 Nr. 6 im Anhang zu berichten ist, soweit sie nicht nach den Absätzen 2 bis 5 berücksichtigt sind.

§ 3a Nachholung der Inventur

(1) Ist die nach § 3 vorgeschriebene Inventur nicht oder nicht ordnungsgemäß durchgeführt worden, so ist eine den Anforderungen des § 3 Abs. 2 bis 6 genügende Inventur auf einen Stichtag innerhalb der Feststellungsfrist nach § 35 Abs. 1 Satz 3 durchzuführen.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muß der Prüfer bei der Inventur anwesend sein. Das Inventar und die Eröffnungsbilanz für den 1. Juli 1990 sind zu berichtigen oder zu ergänzen, wenn sich anhand der neuen Inventu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seit dem 1. Juli 1990 nach § 238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geführten Handelsbücher mengen- oder wertmäßige Abweichungen ergeben. Die Änderungen und Ergänzungen sind im Anhang betragsmäßig anzugeben und zu erläutern.

(2)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ist im Falle des Absatzes 1 der Bestätigungsvermerk ohne den Hinweis auf die Ordnungsmäßigkeit von Inventar und Inventur zu erteilen und, soweit er aus anderen Gründen nicht einzuschränken oder zu versagen ist, wie folgt zu fassen:

"Die Buchführung,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entsprechen nach meiner/unsere pflichtgemäßen Prüfung den gesetzlichen Vorschrift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vermitteln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des Unternehmens. Die Inventur mußte gemäß § 3a des D-Markbilanzgesetzes nachgeholt werden. Ihre Ordnungsmäßigkeit wird bestätigt."

§ 4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in den ersten vier Monaten des Geschäftsjahrs aufzustellen. Unternehmen,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eine Bilanzsumme von höchstens drei Millionen neu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ausweisen oder die am 1. Juli 1990 höchstens fünfzig Arbeitnehmer beschäftigen, dürf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in den ersten sechs Monaten des Geschäftsjahrs aufstellen, wenn dies einem ordnungsgemäßen Geschäftsgang entspricht.

(2)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haben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im Sinne des § 264 Abs. 2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itteln. Führen besondere Umstände dazu, daß die Eröffnungsbilanz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nicht vermittelt, so sind im Anhang zusätzliche Angaben zu machen, sofern ein solcher aufzustellen ist.

(3) Übertragen Unternehmen zum Zwecke der Neustrukturierung oder Privatisierung bis zum 30. Juni 1991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chulden auf andere Unternehmen, so können die sich daraus ergebenden Änderungen in den Eröffnungsbilanzen und Inventaren der betroffenen Unternehmen, jedoch nur übereinstimmend, berücksichtigt werden; ist das übertragende Unternehmen eine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tritt an die Stelle des 30. Juni 1991 der 31. Dezember 1991. Satz 1 ist auch anzuwenden, wenn alle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eines Unternehmens einschließlich der nach diesem Gesetz vorgesehenen Sonderposten übertragen werden. Auf das verbleibende Unternehmen braucht bei Vermögenslosigkeit dieses Gesetz nicht angewendet zu werden; ist es in einem Register eingetragen, so ist es von Amts wegen zu löschen. Die Übertragung von Vermögensgegenständen nach Satz 1 bis zum 31. Dezember 1995 ist stets in der Eröffnungsbilanz und im Inventar zu berücksichtigen, wenn die Treuhandanstalt die Vermögensänderung von einem Unternehmen verlangt hat, dessen Anteile ihr gehören, und ein angemessenes Entgelt nicht gewährt wird. Erfolgt die Übertragung des Vermögensgegenstandes auf ein anderes Unternehmen, dessen Anteile im Zeitpunkt der Übertragung der Treuhandanstalt gehören, so ist die Vermögensänderung auch in der Eröffnungsbilanz und im Inventar des übernehmenden Unternehmens zu berücksichtigen. Die Eröffnungsbilanz gilt als geändert, sobald die Vermögensänderung in dem folgenden Jahresabschluß berücksichtigt worden ist.

§ 5 Anzuwendende Vorschriften

(1) Auf die Eröffnungsbilanz sind die §§ 243 bis 261 des Handelsgesetzbuchs mit Ausnahme von § 243 Abs. 3, § 247 Abs. 3, §§ 252, 253 Abs. 1 Satz 1, Abs. 4, § 255 Abs. 3, § 256 Satz 1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sie sich auf die Bilanz beziehen und dieses Gesetz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enthält; Angaben über verbundene Unternehmen brauchen nicht gemacht zu werden. Unternehmen, die nicht Einzelkaufmann oder

Personenhandelsgesellschaft sind, haben außerdem § 265 Abs. 3 bis 8, §§ 266, 268 Abs. 3 bis 7, §§ 270 bis 272, Genossenschaften die §§ 336, 337 des Handelsgesetzbuchs anzuwenden, soweit dieses Gesetz abweichende Regelungen nicht enthält oder geschäftszweigbezogene Vorschriften über Form und Inhalt der Bilanz nicht zu beachten sind.

(2) Werden in der Eröffnungsbilanz die Größenmerkmale des § 267 Abs. 1 oder 2 des Handelsgesetzbuchs bezüglich der Bilanzsumme oder der Arbeitnehmerzahl nicht überschritten, dürfen kleine Unternehmen die Erleichterungen des § 266 Abs. 1 Satz 3 des Handelsgesetzbuchs und mittelgroße Unternehmen die Erleichterungen des § 327 Nr. 1 des Handelsgesetzbuchs bereits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in Anspruch nehmen.

Unterabschnitt 2

Bilanzansatz- und Bewertungsvorschriften

§ 6 Allgemeine Anforderungen

(1) Bei der Bewertung der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gilt insbesondere folgendes:

1. Bei der Bewertung ist von der Fortführung der Unternehmenstätigkeit auszugehen, sofern dem nicht tatsächliche oder rechtliche Gegebenheiten entgegenstehen.
2. Die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sind zu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einzeln zu bewerten.
3. Es ist vorsichtig zu bewerten, namentlich sind alle vorhersehbaren Risiken und Verluste, die bis zu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entstanden sind, zu berücksichtigen, selbst wenn diese erst zwischen dem Stichtag und dem Tag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bekannt geworden sind; Gewinne sind nur zu berücksichtigen, wenn sie am Stichtag realisiert sind.

(2) Die auf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angewandten Ansatz- und Bewertungsmethoden sind für die folgenden Bilanzen verbindlich, soweit nicht abgewichen werden muß oder eine Abweichung nach § 252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zulässig ist; für die erstmalige Abweichung in einem nachfolgenden Abschluß von einem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übten Wahlrecht bedarf es eines begründeten Ausnahmefalls nicht. Satz 1 gilt auch, wenn sich die Zulässigkeit der Methode nur aus diesem Gesetz ergibt.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angesetzten Werte dürfen jedoch in den Folgebilanzen nicht überschritten werden.

§ 7 Neubewertung

(1)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sind neu zu bewerten. Vermögensgegenstände sind mit ihren Wiederbeschaffungs- oder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zen (Neuwert); sie dürfen jedoch höchstens mit dem Wert angesetzt werden, der ihnen beizulegen ist (Zeitwert). Wesentliche Werterhöhungen, die innerhalb von vier Monaten nach dem Bilanzstichtag eintreten, sind zu berücksichtigen. Die bisherige Nutz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ihr Zurückbleiben hinter dem technischen Fortschritt sind bei der Ermittlung des Zeitwerts durch einen Wertabschlag zu berücksichtigen.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angesetzten Werte gelten für die Folgezeit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soweit Berichtigungen nach § 36 nicht vorzunehmen sind.

(2) Auf die Ermittlung der Wiederbeschaffungskosten ist § 255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Anschaffungskosten entsprechend anzuwenden. Dabei ist von den Preisverhältnissen im gesamten Währungsgebiet der Deutschen Mark auszugehen.

(3) Auf die Ermittlung der Wiederherstellungskosten ist § 255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Herstellungskosten entsprechend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ie in dessen Satz 3 bezeichneten Aufwendungen einzurechnen sind; Zinsen für Fremdkapital dürfen nicht angesetzt werden. Der Berechnung der Aufwendungen für den Verbrauch von Gütern und für bezogene Leistungen sind deren Wiederbeschaffungskosten gemäß Absatz 2 und der Berechnung von Aufwendungen für eigene Leistungen die Lohn- und Gehaltsverhältniss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runde zu legen. Erhöhungen der Personalkosten innerhalb der ersten vier Monate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dürfen berücksichtigt werden.

(4) Bei abnutzbaren Vermögensgegenständen ist der Wertabschlag für die bisherige Nutzung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53 Abs. 2 Satz 1 und 2 des Handelsgesetzbuchs zu bemessen. Bei der Festlegung der Nutzungsdauer abnutzbarer Vermögensgegenstände sind die Zeiten zugrunde zu legen, die für die steuerliche Gewinnermittlung ab 1. Juli 1990 anzusetzen sind. Bei abnutzbaren Vermögensgegenständen, deren tatsächliche Nutzung die Nutzungsdauer nach Satz 2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voraussichtlich überschreitet, darf der Wer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längeren Nutzungsdauer angesetzt werden, höchstens jedoch mit der Nutzungsdauer, die vor dem 1. Juli 1990 zulässig war.

(5) Vermögensgegenstände, die im Unternehmen nicht mehr verwendet werden, sind mit dem zu erwartenden Verkaufserlös nach Abzug der noch anfallenden Kosten anzusetzen (Veräußerungswert). Vermögensgegenstände, die noch genutzt werden, aber vor dem 1. Juli 1990 bereits vollständig abgeschrieben worden sind, dürfen höchstens mit ihrem Veräußerungswert angesetzt werden.

(6)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nach dem Vermögensgesetz sind in die Eröffnungsbilanz mit dem Wert aufzunehmen, der dem rückgabepflichtigen Unternehmen nach § 11 oder zurückzugebenden Vermögensgegenständen nach den §§ 8 bis 18 zukommt. In Höhe des aktivierten Betrags ist innerhalb der Gewinnrücklagen eine Sonderrücklage zu bilden, die bis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soweit sie nicht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benötigt wird.

§ 8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1) Das Bilanzierungsverbot des § 248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für selbst geschaffene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gilt auch, wenn die Vermögensgegenstände im Wege der Umwandlung vor dem 1. Juli 1990 erworben worden sind. Ein unentgeltlich erworbener Geschäfts- oder Firmenwert darf nicht angesetzt werden; § 31 Abs. 1 Nr. 1 bleibt unberührt.

(2) Entgeltlich erworbene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die technisch oder wirtschaftlich überholt sind, dürfen höchstens mit ihrem Veräußerungswert angesetzt werden.

(3) Statt der Summe der aus der Einzelbewertung der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sich ergebenden Beträge kann der Betrag angesetzt werden, den ein Käufer bei Fortführung des Unternehmens im Rahmen des Gesamtkaufpreises für die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insgesamt zu zahlen bereit wäre. Der Betrag ist, soweit es sich um abnutzbare Vermögensgegenstände handelt,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55 Abs. 4 des Handelsgesetzbuchs abzuschreiben.

§ 9 Grund und Boden

(1) Grund und Boden ist mit seinem Verkehrswert anzusetzen. Dabei darf die Preisentwicklung im gesamten Währungsgebiet der Deutschen Mark bis zu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berücksichtigt werden. Bis zur Bildung von selbständigen und unabhängigen Gutachterausschüssen für die Ermittlung der Grundstückswerte und für sonstige Wertermittlungen können für die Ermittlung des Verkehrswerts die vo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empfohlenen Richtwerte herangezogen werden.

(2) Bestehen Nutzungs-, Verfügungs- oder Verwertungsbeschränkungen, die den Verkehrswert nach allgemeiner Verkehrsauffassung wesentlich beeinträchtigen, so sind diese wertmindernd zu berücksichtigen. Dies gilt auch für künftige Rekultivierungs- und Entsorgungsverpflichtungen, soweit sie den Eigentümer betreffen. Aufwendungen nach Satz 2 dürfen nicht wertmindernd berücksichtigt werd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17 Abs. 2a oder § 249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ird.

(3) Ein unentgeltlich auf mindestens zehn Jahre unentziehbar eingeräumtes grundstücksgleiches Recht darf mit dem Barwert der üblichen Nutzungsentschädigung angesetzt werden, wenn der dazu gehörende Grund und Boden wie Anlagevermögen genutzt wird. Der angesetzte Betrag ist in der Bilanz oder im Anhang gesondert anzugeben.

§ 10 Bauten und andere Anlagen

(1) Gebäude und andere Bauten, technische und andere Anlagen, Maschinen, Betriebs- und Geschäftsausstattung sind mit ihren Wiederherstellungskosten (§ 7 Abs. 3) oder mit ihren Wiederbeschaffungskosten (§ 7 Abs. 2)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ertabschlags für zwischenzeitliche Nutzung (§ 7 Abs. 4), höchstens jedoch mit ihrem Zeitwert (§ 7 Abs. 1 Satz 2) anzusetzen. Unterlassene Instandhaltungen

und Großreparaturen zur Erhaltung sind bei der Ermittlung des Zeitwerts wertmindernd zu berücksichtig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nicht gebildet wird.

(2) Als Zeitwert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Vermögensgegenstände kann auch ihr höherer Verkehrswert angesetzt werden. Unterlassene Instandhaltungen und Großreparaturen zur Erhaltung des Vermögensgegenstandes dürfen bei Ansatz des Verkehrswerts nicht wertmindernd berücksichtigt werd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2 Nr. 1 oder Satz 3 oder Ab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ird.

§ 11 Finanzanlagen

(1) Beteiligungen an einem anderen Unternehmen nach § 1 sind in der Eröffnungsbilanz mit dem Betrag anzusetzen, der dem ausgewiesenen anteiligen Eigenkapital (§ 26 Abs. 1) in der Eröffnungsbilanz dieses Unternehmens entspricht. Steht dem anderen Unternehmen eine Ausgleichsforderung oder eine Forderung auf Einzahlung von Eigenkapital gegen das beteiligte Unternehmen zu, so sind diese unter den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verbundenen Unternehmen gesondert auszuweisen. Andere Beteiligungen sind mit ihrem Verkehrswert anzusetzen. Satz 3 darf auch auf Beteiligungen nach Satz 1 angewandt werden.

(2) Aktien und andere Wertpapiere, die an einer Börse zum amtlichen Handel oder zum geregelten Markt zugelassen oder in den Freiverkehr einbezogen sind, sind mit ihrem Kurswert a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anzusetzen.

(3) Ausleihung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sind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zustellen,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 12 Vorräte

(1) Roh-, Hilfs- und Betriebsstoffe sind mit ihren Wiederbeschaffungs- oder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zen.

(2) Unfertige Erzeugnisse und Leistungen sowie fertige Erzeugnisse sind mit ihren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zen. Bei fertigen Erzeugnissen darf, wenn dies einer vereinfachten Ermittlung der Wiederherstellungskosten dient, der Betrag angesetzt werden, der sich ergibt, wenn von den zu erwartenden Erlösen die Vertriebskosten und der zu erwartende Gewinn abgesetzt werden. Dieses Verfahren darf auch auf unfertige Erzeugnisse und Leistungen angewandt werden, wenn die bis zur Fertigstellung zusätzlich anfallenden Kosten, die ebenfalls abzusetzen sind, zuverlässig berechnet werden können.

(3) Waren, die ohne Be- oder Verarbeitung zur Weiterveräußerung bestimmt sind, sind mit den Wiederbeschaffungskosten anzusetzen. Absatz 2 Satz 2 darf entsprechend angewandt werden.

(4) Vorräte nach den Absätzen 1 bis 3 sind jedoch höchstens mit ihrem Zeitwert (§ 7 Abs. 1 Satz 1) anzusetzen. § 7 Abs. 5 Satz 1 bleibt unberührt.

§ 13 Forderungen

(1)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Forderung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werden, soweit Absatz 2 nichts anderes bestimmt,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2) Abweichend von Absatz 1 werden Mieten und Pachten sowie sonstige regelmäßig wiederkehrende Zahlung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3) Der Grundsatz der Einzelbewertung ist zu beachten. Minderverzinsliche oder unverzinsliche Forderungen sowie zweifelhafte Forderungen sind mit dem niedrigeren beizulegenden Wert anzusetzen; eingeräumte Sicherheiten sind zu berücksichtigen. Pauschalwertberichtigungen wegen des allgemeinen Kreditrisikos sind vom Gesamtbetrag der Forderungen abzusetzen.

(4) Forderungen, die Verbindlichkeiten nach § 16 Abs. 3 und 4 entsprechen, dürfen nicht angesetzt werden.

(5) Ausstehende Einlagen sind, auch wenn sie nicht eingefordert sind, wie Forderungen zu bewerten, jedoch nicht abzuzinsen.

§ 14 Kassenbestand, Schecks, Guthaben bei Geldinstituten

(1) Zahlungsmittel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nur anzusetzen, soweit sie weiterhin gesetzliche Zahlungsmittel sind.

(2) Schecks sind wie Forderungen zu behandeln.

(3) Guthaben bei Geldinstitut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mit dem Betrag anzusetzen, den das Geldinstitut in Deutscher Mark gutbringen muß.

§ 15 Rechnungsabgrenzungsposten

Aktive und passive Rechnungsabgrenzungsposten nach § 250 des Handelsgesetzbuchs sind im Verhältnis von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soweit nicht ein anderes Umstellungsverhältnis vorgeschrieben ist.

§ 16 Verbindlichkeiten

(1)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Verbindlichkeit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werden, soweit Absatz 2 nichts anderes bestimmt,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2) Abweichend von Absatz 1 werden folgende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Verbindlichkeit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1. Löhne und Gehälter in Höhe der nach dem 1. Mai 1990 geltenden Tarifverträge sowie Stipendi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2. Rent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soweit sich aus Artikel 20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ichts anderes ergibt;
3. Mieten und Pachten sowie sonstige regelmäßig wiederkehrende Zahlung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mit Ausnahme wiederkehrender Zahlungen aus und in Lebensversicherungen und privaten Rentenversicherungen.

(3) Verbindlichkeiten sind i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aufzunehmen, wenn eine schriftliche Erklärung des Gläubigers vorliegt, daß er

1. Zahlung nur verlangen wird, soweit die Erfüllung aus dem Jahresüberschuß möglich ist, und
2. im Falle der Auflösung, Zahlungsunfähigkeit oder Überschuldung des Unternehmens hinter alle Gläubiger zurücktritt, die eine solche Erklärung nicht abgegeben haben.

Der Gesamtbetrag solcher Verbindlichkeiten ist im Anhang unter den sonstigen finanziellen Verpflichtungen gesondert anzugeben, soweit sie nicht auf Grund einer Vereinbarung mit dem Unternehmen als nachrangiges Kapital ausgewiesen werden.

(4) Verbindlichkeiten, die bis zu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lassen oder von einem Dritten unentgeltlich übernommen werden, sind nicht zu bilanzieren.

§ 17 Rückstellungen

(1) Ungewisse Verbindlichkeiten, die vor dem 1. Juli 1990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gründet wurden, sind wie Verbindlichkeiten in Deutsche Mark umzurechnen und als Rückstellungen auszuweisen.

(2) Rückstellungen für drohende Verluste aus schwebenden Geschäften nach § 24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sind in der Eröffnungsbilanz neu zu bilden. Sie sind insbesondere einzustellen, wenn zu erwarten ist, daß ein Absatz- oder Beschaffungsgeschäft nach Erfüllung zu einem Aufwand führt, der die Gegenleistung übersteigt, oder zu einer Abschreibung auf den gelieferten Gegenstand führt.

(2a) Rückstellungen für Maßnahmen zur Abwehr von Gefahren für Mensch und Umwelt, die von Umweltbeeinträchtigungen ausgehen, und zur Beseitigung von Umweltbeeinträchtigungen sind zu bilden, soweit eine gesetzliche oder vertragliche Verpflichtung besteht und die Art und der Umfang der notwendigen und angemessenen Maßnahmen nachgewiesen oder von der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 angeordnet sind. Die Rückstellung ist auch zu bilden, soweit die Durchführung der Maßnahmen zu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für Vermögensgegenstände führt, die nach § 253 Abs. 2 Satz 3 oder Absatz 3 des Handelsgesetzbuchs im Zeitpunkt der Anschaffung oder Herstellung in vollem Umfang abzuschreiben sind. Die Rückstellung ist aufzulösen, wenn die Maßnahmen nicht bis zum 31. Dezember 1997 begonnen worden sind und für die Zeit danach weder ein Verwaltungsakt der zuständigen Behörde noch eine Vereinbarung mit dieser vorliegt, noch das Unternehmen diese vom Vorliegen von Gefahren oder Beeinträchtigungen im Sinne des Satzes 1 unterrichtet hat.

(3) Rückstellungen, die nicht nach Absatz 1 umzurechnen sind, sind in Höhe des Betrags in Deutscher Mark anzusetzen, der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notwendig ist, um die Verpflichtung zu erfüllen.

(4) Werden Rückstellungen wegen der erstmaligen Anwendung des § 24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in der Eröffnungsbilanz gebildet, so ist in Höhe des Betrags dieser Rückstellungen, soweit er nicht durch eine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1 Satz 1 oder § 40 ausgeglichen wird, auf der Aktivseite ein Sonderverlustkonto aus Rückstellungsbildung gesondert auszuweisen; dies gilt nicht für Rückstellungen für ungewisse Rückgabeverpflichtungen nach § 7 Abs. 6. Der aktivierte Betrag ist in den Folgejahren jeweils in Höhe der Aufwendungen abzuschreiben, die zur Erfüllung der zurückgestellten Verpflichtungen entstehen. In Höhe des Sonderverlustkontos ist innerhalb der Gewinnrücklagen eine Sonderrücklage zu bilden, die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im Falle der Inanspruchnahme oder Auflösung der Rückstellung in einem späteren Jahresabschluß, wird die Rücklage in Höhe des jeweils aufgelösten Betrags frei verfügbar, soweit sie nicht zum Ausgleich eines eingetretenen Verlustes benötigt wird. Der aktivierte Betrag ist nicht geeignet, eine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n Fehlbetrag zu beseitigen oder Ausstehende Einlagen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das Kapitalent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Abs. 1 zu ersetzen.

(4a) Wird eine Rückstellung aufgelöst, ohne daß diese in Anspruch genommen wurde, wird auch das Sonderverlustkonto in Höhe des aufgelösten Betrags abgeschrieb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icht in Anspruch genommen wird, weil eine Freistellung, insbesondere nach Artikel 1 § 4 Abs. 3 Umweltrahmengesetz, erfolgt ist oder die Verpflichtung in anderer Weise von einem Dritten wirtschaftlich getragen wird, so ist, wenn die Rückstellung zu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geführt hat, der aufgelöste Betrag mit der Ausgleichsforderung zu verrechnen, wenn diese nach § 36 Abs. 4 nicht mehr geändert werden kann. Ist die Ausgleichsforderung vom Schuldner bereits getilgt oder vom Gläubiger an einen Dritten abgetreten oder verpfändet worden, ist der Betrag, der nach Satz 2 hätte verrechnet werden können, von demjenigen, der die Rückstellung aufgelöst hat, an den ursprünglichen Schuldner zurückzuzahlen. Satz 3 gilt auch, soweit eine vom Unternehmen geltend gemachte Ausgleichsforderung dadurch entfallen ist, daß der Schuldner Altkredite des Unternehmens schuldbefreiend übernommen hat.

(4b) Sind eine Ausgleichsforderung oder ein Sonderverlustkonto in den Fällen des Absatzes 4 oder 4a den Rückstellungen nicht eindeutig zuzuordnen, so ist zu vermuten, daß Rückstellungen nach Absatz 2a vorweg zu einer Ausgleichsforderung geführt haben.

(5) § 249 Abs. 1 Satz 2 Nr. 1 des Handelsgesetzbuchs braucht nicht angewandt zu werden. § 249 des Handelsgesetzbuchs bleibt im übrigen unberührt. Anstelle eines Wertabschlags nach § 9 Abs. 2 Satz 2 oder § 10 Abs. 1 Satz 2 oder Abs. 2 Satz 2 kann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2 Nr. 1 oder Satz 3 oder Ab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erden, wenn die Voraussetzungen hierfür erfüllt sind. § 16 Abs. 3 und 4 ist entsprechend anzuwenden.

§ 18 Währungsumrechnung

Auf ausländische Währung lautende Vermögensgegenstände, Schulden und Rechnungsabgrenzungsposten sowie am Bilanzstichtag nicht abgewickelte Kassa-Geschäfte sind mit dem Kassa-Kurs am Bilanzstichtag in Deutsche Mark umzurechnen. Nicht abgewickelte Termingeschäfte sind zum Terminkurs am Bilanzstichtag umzurechnen. Forderungen und Lieferansprüche sind mit dem Geldkurs, Verbindlichkeiten und Lieferverpflichtungen mit dem Briefkurs umzurechnen.

Unterabschnitt 3

Anhang. Vergleichende Darstellung

§ 19 Anhang

(1) Im Anhang sind die auf die Posten der Eröffnungsbilanz angewandten Bilanzierungs- und Bewertungsmethoden, insbesondere die bei der Neubewertung angewandten, anzugeben und so zu erläutern, daß ein sachverständiger Dritter die Wertansätze beurteilen kann; insbesondere sind bei Schätzungen die Vergleichsmaßstäbe darzustellen. Bei der Ausübung von Wahlrechten sind wesentliche Auswirkungen auf die Vermögenslage gesondert darzustellen. Außerdem sind diejenigen Angaben aufzunehmen, die zu den einzelnen Posten der Eröffnungsbilanz vorgeschrieben oder die im Anhang zu machen sind, weil sie in Ausübung eines Wahlrechts nicht in die Eröffnungsbilanz aufgenommen wurden.

(2) Im Anhang sind die Maßnahmen zu beschreiben, die für die Zeit nach dem 30. Juni 1990 getroffen oder geplant worden sind, um das Unternehmen an die veränderten Bedingungen anzupassen. Dazu gehören insbesondere Änderungen des Unternehmenszwecks, Aufgabe oder Neuaufnahme von Produkten, Stilllegungen, die Aufspaltung oder der Zusammenschluß mit anderen Unternehmen. Die voraussichtlichen Kosten der Umstrukturierung sind anzugeben.

(3) Im Anhang sind ferner anzugeben:

1. zu den in der Bilanz ausgewiesenen Verbindlichkeiten
 - a) der Gesamtbetrag der Verbindlichkeiten mit einer Restlaufzeit von mehr als fünf Jahren,
 - b) der Gesamtbetrag der Verbindlichkeiten, die durch Pfandrechte oder ähnliche Rechte gesichert sind, unter Angabe von Art und Form der Sicherheiten;
2. die Aufgliederung der in Nummer 1 verlangten Angaben für jeden Posten der Verbindlichkeiten nach dem vorgeschriebenen Gliederungsschema, sofern sich diese Angaben nicht aus der Bilanz ergeben;
3. zu dem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Grund und Boden sowie zu den Gebäuden und anderen Bauten sind alle gesetzlichen oder vertraglichen Einschränkungen zu vermerken, die sich auf deren Nutzung, Verfügbarkeit oder Verwertung beziehen. Es sind außerdem alle Sachverhalte anzugeben, aus denen sich künftige finanzielle Verpflichtungen ergeben können, insbesondere für Großreparaturen, Rekultivierungs- oder Entsorgungsaufwendungen;
4. zu den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technischen Anlagen und Maschinen, anderen Anlagen sowie der Betriebs- und Geschäftsausstattung sind deren Zustand (durchschnittliche Abnutzung, technischer Stand) und deren zukünftige Einsatzmöglichkeiten zu beschreiben; der voraussichtliche Investitionsbedarf in den nächsten vier Jahren ist, soweit vorhersehbar, anzugeben;
5. Ansprüche, die sich gegen das Unternehmen ergeben können, weil die früheren Eigentümer des Unternehmens, von Unternehmensteilen, Betrieben oder von Vermögensgegenständen enteignet worden sind;
6. der Gesamtbetrag der sonstigen finanziellen Verpflichtungen, die nicht in der Bilanz erscheinen und die auch nicht nach § 251 des Handelsgesetzbuchs oder auf Grund anderer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anzugeben sind, sofern diese Angaben für die Beurteilung der Finanzlage von Bedeutung sind; davon sind Verpflichtungen gegenüber Gesellschaftern gesondert anzugeben;
7. die Zahl der beschäftigten Arbeitnehmer;
8. alle Mitglieder des Geschäftsführungsorgans und eines Aufsichtsrats, auch wenn sie nur vorläufig bestellt sind, mit dem Familiennamen und mindestens einem ausgeschriebenen Vornamen. Der Vorsitzende eines Aufsichtsrats, seine Stellvertreter und ein etwaiger Vorsitzender des Geschäftsführungsorgans sind als solche zu bezeichnen;
9. Name und Sitz anderer Unternehmen, von denen das Unternehmen oder eine für seine Rechnung handelnde Person mindestens den fünften Teil der Anteile besitzt; außerdem sind die Höhe des Anteils am Kapital und das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 Eigenkapital oder ei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r Fehlbetrag dieser Unternehmen anzugeben; auf die Berechnung der Anteile ist § 16 Abs. 2 und 4 des Aktien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10. Rückstellungen, die in der Bilanz unter dem Posten "sonstige Rückstellungen" nicht gesondert ausgewiesen werden, sind zu erläutern, wenn sie einen nicht unerheblichen Umfang haben. Aufwandrückstellungen sind stets gesondert anzugeben und zu erläutern;

11. Name und Sitz des unmittelbaren Mutterunternehmens sowie der Ort der Offenlegung der von diesem Mutterunternehmen aufgestellten Konzerneneröffnungsbilanz.
- (4) Die in Absatz 2 und 3 verlangten Angaben und Erläuterungen können unterbleiben, soweit sie
1. für die Darstellung der Vermögenslage des Unternehmens nach § 264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von untergeordneter Bedeutung sind oder
 2. in den Fällen der Absätze 2 und 3 Nr. 4 und 9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geeignet sind, dem Unternehmen einen erheblichen Nachteil zuzufügen.

§ 20 Vergleichende Darstellung

Unternehmen, die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haben dem Anhang eine vergleichende Darstellung als Anlage beizufügen, aus der sich ergibt, in welchem Umfang die Posten der Schlußbilanz zum 30. Juni 1990 im Vergleich mit den Posten der D-Mark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sich verändert haben. Die sich aus der Neubewert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der Schulden ergebenden Differenzen gegenüber der Schlußbilanz sind in einem gesonderten Nachweis unter der Bezeichnung Neubewertungsdifferenzen, gegliedert nach den Posten der D-Markeröffnungsbilanz, darzustellen. Die Neubewertungsdifferenzen sind durch Einzelnachweise zu dokumentieren.

Abschnitt 2 Konzerneröffnungsbilanz. Gesamteröffnungsbilanz

§ 21 Pflicht zur Aufstellung

(1) Zur Aufstellung einer Eröffnungsbilanz verpflichtete Unternehmen, die die Mehrheit der Anteile an einem anderen Unternehmen (Tochterunternehmen) besitzen (Mutterunternehmen), haben spätestens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für kleine Unternehmen nach § 35 Abs. 1 Satz 3 für den 1. Juli 1990 eine Konzernen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sowie einen Anhang gemäß § 22 aufzustellen, der mit der Konzerneneröffnungsbilanz eine Einheit bildet. Ein Mutterunternehmen ist von der Pflicht zur Aufstellung der Konzerneneröffnungsbilanz und des Anhangs befreit, wenn am Stichtag die Bilanzsummen in den Eröffnungsbilanzen des Mutterunternehmens und der einzubeziehenden Tochterunternehmen nach Abzug von in den Eröffnungsbilanzen auf der Aktivseite ausgewiesenen Fehlbeträgen insgesamt fünfzig Millionen Deutsche Mark nicht überschreiten oder die Konzernunternehmen insgesamt nicht mehr als fünfhundert Arbeitnehmer beschäftigen.

(2) Die Konzernen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klar und übersichtlich aufzustellen. Sie haben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des Konzerns im Sinne des § 297 Abs. 2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itteln. Führen besondere Umstände dazu, daß die Konzerneneröffnungsbilanz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im Sinne des Satzes 2 nicht vermittelt, so sind im Konzernanhang zusätzliche Angaben zu machen.

(3) In die Konzerneneröffnungsbilanz sind das Mutterunternehmen und alle Tochterunternehmen ohne Rücksicht auf den Sitz der Tochterunternehmen einzubeziehen, sofern die Einbeziehung nicht nach den §§ 295, 296 des Handelsgesetzbuchs unterbleibt. Ändert sich die Zusammensetzung des Konzerns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so sind diese Änderungen so zu behandeln, als wären sie bereits zum 1. Juli 1990 eingetreten. Dies gilt auch für Unternehmen, die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nach dem 1. Juli 1990 gegründet werden.

(4) Auf die Konzerneneröffnungsbilanz sind die §§ 5 bis 19 dieses Gesetzes sowie die §§ 296 bis 298, 300, 301, 303, 304, 307, 308, 310 bis 312 des Handelsgesetzbuchs und die für die Rechtsform und den Geschäftszweig der in die Konzerneneröffnungsbilanz einbezogenen Unternehmen mit Sitz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geltenden Vorschriften mit Ausnahme des § 296 Abs. 1 Nr. 3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sie sich auf die Bilanz großer Kapitalgesellschaften beziehen und die Konzerneneröffnungsbilanz wegen ihrer Eigenart keine Abweichungen bedingt. Bei der Anwendung des § 308 des Handelsgesetzbuchs kann unterstellt werden, daß die Eröffnungsbilanzen von Tochter- und Mutterunternehmen mit Sitz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einheitlich bewertet sind.

(5) Die Treuhandanstalt und die von ihr gegründeten Treuhand-Aktiengesellschaften stellen in den erste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für die Konzerneneröffnungsbilanz nach § 35 Abs. 1 Satz 3

anstatt einer Konzernöffnungsbilanz eine Gesamteröffnungsbilanz in vereinfachter Form und anstatt eines Konzernanhangs einen Gesamtanhang auf. Sie fassen jeweils die Gesamt- oder Konzernöffnungsbilanzen ihrer Tochtergesellschaften zusammen. Bei der Kapitalkonsolidierung nach § 301 des Handelsgesetzbuchs kann unterstellt werden, daß ein nach Verrechnung auf der Aktivseite entstehender Unterschiedsbetrag Geschäfts- oder Firmenwert oder ein auf der Passivseite entstehender Unterschiedsbetrag Eigenkapital ist, soweit er im letzteren Fall nicht auf unterlassene Rückstellungen zurückzuführen ist. § 303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Schuldenkonsolidierung braucht nur auf Geschäfte zwischen den Mutterunternehmen und ihren jeweiligen Tochterunternehmen angewandt zu werden. Auch brauchen Zwischenergebnisse nach § 304 des Handelsgesetzbuchs nur herausgerechnet zu werden, wenn sie auf Lieferungen und Leistungen zwischen den aufstellenden Mutterunternehmen und ihren jeweiligen Tochterunternehmen beruhen. Im übrigen sind auf die Aufstellung, Prüfung, Feststellung und Offenlegung die nach diesem Gesetz für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n Konzernanhang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 22 Konzernanhang

(1) Auf den Konzernanhang ist § 19 entsprechend anzuwenden. Aus den Anhängen der Tochterunternehmen sind jedoch nur diejenigen Angaben zusammenfassend zu übernehmen, die für die Beurteilung des Konzerns von wesentlicher Bedeutung sind.

(2) Im Konzernanhang sind außerdem die nach § 313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verlangten Angaben zu machen. § 313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ist anzuwenden.

§ 23 Vorlage- und Auskunftspflichten

(1) Jedes Mutterunternehmen kann von seinen Tochterunternehmen alle Aufklärungen und Nachweise verlangen, welche die Aufstellung der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s Konzernanhangs erfordert. Dies gilt auch für Auskünfte, die sich auf andere, dem Mutterunternehmen durch Gesetz übertragene Aufgaben beziehen.

(2) Die Tochterunternehmen haben jedem Mutterunternehmen ihre Eröffnungsbilanz einschließlich Anhang und, wenn sie gleichzeitig Mutterunternehmen sind, ihre Konzernöffnungsbilanz einschließlich Konzernanhang unverzüglich nach deren Aufstellung und die Prüfungsberichte unverzüglich nach deren Eingang einzureichen. Werden die einzureichenden Unterlagen nachträglich geändert, so sind die geänderten Fassungen unverzüglich nach der Änderung einzureichen. Werden die Unterlagen vor ihrer Feststellung eingereicht, ist die Feststellung mitzuteilen, sobald diese erfolgt ist.

Abschnitt 3 Kapitalausstattung

Unterabschnitt 4 Vermögensausgleich und Eigenkapitalsicherung von bisher volkseigenen Unternehmen

§ 24 Ausgleichsforderungen

(1) Unternehmen, die als bisher volkseigenes Vermögen der Treuhandanstalt oder einem ihrer Tochterunternehmen zur Privatisierung oder dem Staat, den Gemeinden, Städten, Kreisen, Ländern oder anderen Vermögensträgern unentgeltlich übertragen wurden und sich am 1. Juli 1990 noch in deren alleinigem Anteilsbesitz befanden, und die nicht Geldinstitute, Außenhandelsbetriebe oder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erhalten,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daß sie eine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n Fehlbetrag ausweisen müßt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eine gesondert auszuweisende verzinsliche Forderung (Ausgleichsforderung) in Höhe des Fehlbetrags, wenn der Schuldner die Ausgleichsforderung nicht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Einreichung der festgestellten Eröffnungsbilanz ablehnt. Er hat sie abzulehnen, wenn das Unternehmen nicht sanierungsfähig ist. Die Ablehnung ist dem Unternehmen schriftlich mitzuteilen. Die Ausgleichsforderung und die dazu gehörenden Zinsen entfallen mit dem Zugang der Ablehnungserklärung.

(2) Die Ausgleichsforderung mindert sich in Höhe des Betrags, um den der Fehlbetrag durch Ausnutzung von Ansatz- oder Bewertungswahlrechten ausgeglichen werden kann. § 36 bleibt unberührt. Die Ausgleichsforderung ist so zu verzinsen, daß eine Abwertung wegen Minderverzinsung nach § 13 Abs. 3 Satz 2 nicht notwendig wird.

(3) Die Ausgleichsforderung richtet sich gegen das Unternehmen, dem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die Anteilsrechte an dem berechtigten Unternehmen unentgeltlich übertragen worden sind. Sind Unternehmen als ehemals volkseigenes Vermögen dem Staat, den Ländern, Kreisen, Städten, Gemeinden oder anderen Vermögensträgern durch Gesetz übertragen worden, richtet sich die Ausgleichsforderung gegen diese Stellen. Werden der Treuhandanstalt zustehende Anteilsrechte unentgeltlich auf Tochterunternehmen übertragen, so sind diese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Diese können ihrerseits Ausgleichsforderungen nach Absatz 1 gegen die Treuhandanstalt geltend machen, wenn sie ein unmittelbares Tochterunternehmen der Treuhandanstalt sind.

(4) Das Unternehmen hat den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zu unterrichten, sobald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ine solche abzeichnet. Dem Schuldner stehen die Rechte nach § 23 ab 1. Juli 1990 zu. Die Treuhandanstalt unterrichtet unverzüglich den Minister der Finanzen und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über Ausgleichsforderungen, die gegen die Treuhandanstalt gerichtet sind.

(4a) Das Unternehmen hat den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auch zu unterrichten, sobald sich eine Verrechnung der Ausgleichsforderung oder eine Rückzahlungsverpflichtung nach § 17 Abs. 4a Satz 2 und 3 oder § 36 Abs. 4 Satz 5 ergibt. Die Einhaltung der Unterrichtung ist von dem für die Prüfung des Jahresabschlusses bestellten Prüfer im Rahmen der Prüfung des Jahresabschlusses zu prüfen. Er hat den Bestätigungsvermerk nach § 322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zu ergänzen, wenn die Unterrichtung nach Satz 1 unterblieben ist.

(5) Mutterunternehmen, die Schuldner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Absatz 1 sind, stellen in Höhe ihrer Verbindlichkeit aus dieser Ausgleichsforderung auf der Aktivseite ihrer Eröffnungsbilanz ein Beteiligungsentwertungskonto ein, soweit nicht ei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r Fehlbetrag auszuweisen ist. Der aktivierte Betrag ist in den Folgejahren jeweils in Höhe der Tilgung der Ausgleichsforderung abzuschreiben. In Höhe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ist innerhalb der Gewinnrücklagen eine Sonderrücklage zu bilden, die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die Sonderrücklage wird entsprechend der Auflösung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frei verfügbar, soweit sie nicht zum Ausgleich eines eingetretenen Verlustes benötigt wird. Der aktivierte Betrag ist nicht geeignet, Ausstehende Einlagen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das Kapitalent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Abs. 1 zu ersetzen.

§ 25 Ausgleichsverbindlichkeiten

(1)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von in § 24 Abs. 1 Satz 1 bezeichneten Unternehmen, daß ein höheres Eigenkapital auszuweisen wäre, als es dem für das Sachanlagevermögen auszuweisenden Betrag, vermindert um den für den zum 1. Juli 1990 übergegangenen Grund und Boden auszuweisenden Betrag, entspricht, so werden sie in Höhe des übersteigenden Betrags mit einer gesondert auszuweisenden Ausgleichsverbindlichkeit belastet. Das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oder seine Tätigkeit gesetzlich vorgeschriebene Mindestkapital darf jedoch nicht unterschritten werden. § 36 bleibt unberührt. Bei der Berechn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en sind Sonderrücklagen nach § 17 Abs. 4 Satz 3, § 24 Abs. 5 Satz 3 und gezeichnetes Kapital, das über Ausstehende Einlagen oder ein Kapitalent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gebildet wird, nicht zu berücksichtigen. Vermögensgegenstände des Sachanlagevermögens, die nach dem Vermögensgesetz zurückzugeben sind, und die Verbindlichkeit oder Rückstellung für die Rückgabeverpflichtung nach § 7 Abs. 6 sind bei der Berechn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ebenfalls nicht zu berücksichtigen. § 24 Abs. 2 Satz 1 ist entsprechend anzuwenden.

(2) Gläubiger der Verbindlichkeit ist diejenige Person, die bei Entstehen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3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wäre. Auf die Verzins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ist § 24 Abs. 2 Satz 3 entsprechend anzuwenden. Der Anteilseigner kann als Gläubiger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ganz oder teilweise erlassen. Der erlassene Betrag ist in der Eröffnungsbilanz des Mutterunternehmens dem Beteiligungsbuchwert nach § 11 Abs. 1 Satz 1 zuzuschreiben.

(3) Das Unternehmen hat den Gläubiger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zu unterrichten, sobald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ine solche abzeichnet. Dem Gläubiger stehen die Rechte nach § 23 ab 1. Juli 1990 zu.

(4) Mutterunternehmen, die Gläubiger einer Ausgleichsverbindlichkeit nach Absatz 1 sind, stellen in Höhe dieses Betrags auf der Aktivseite ihrer Eröffnungsbilanz eine entsprechende Forderung ein. Beträge, die dem Mutterunternehmen zur Tilg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des Tochterunternehmens zufließen, werden mit dieser Forderung jeweils verrechnet.

(5) Sind Beteiligungen oder Grund und Boden auf ein Unternehmen mit Wirkung zum 1. Juli 1990 unentgeltlich übergegangen, so kann die Treuhandanstalt die Herausgabe der Vermögensgegenstände verlangen, wenn sich die Zahlungsunfähigkeit oder die Überschuldung des Unternehmens ergibt oder wenn die Auflösung des Unternehmens beschlossen wird. Soweit Gläubiger, deren Ansprüche nach dem 1. Juli 1990 entstanden sind, durch die Übertragung benachteiligt werden, sind sie von der Treuhandanstalt bis zur Höhe des Verkehrswerts der übertragenen Vermögensgegenstände schadlos zu stellen; im Falle der Eröffnung der Gesamtvollstreckung kann dieser Anspruch nur vom Verwalter geltend gemacht werden.

(6) Die Treuhandanstalt kann von Unternehmen, deren Anteile ihr gehören und die nicht nach § 6 des Vermögensgesetzes zurückzugeben sind, die Übertragung von Vermögensgegenständen verlangen. In der Zeit vom 1. Juli 1990 bis zum Zeitpunkt der Übertragung entstandene Abschreibungen, Wertberichtigungen und Rückstellungen sind nach § 36 zu berichtigen. Absatz 5 Satz 2 ist entsprechend anzuwenden.

§ 26 Eigenkapitalsicherung

(1) Unternehmen im Sinne des § 24 Abs. 1 Satz 1 haben als Eigenkapital den Betrag auszuweisen, um den der Gesamtbetrag der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einschließlich der nach diesem Gesetz einzustellenden Sonderposten und der Rechnungsabgrenzungsposten höher ist als der Gesamtbetrag der auf der Passivseite ausgewiesenen Schulden und der Rechnungsabgrenzung.

(2) Ist dem Unternehmen nach dem für seine Rechtsform maßgeblichen Recht die Bildung eines gezeichneten Kapitals vorgeschrieben, so ist dieses in der in der Satzung oder im Gesellschaftsvertrag vorgesehenen Höhe, zumindest aber in Höhe des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neu festzusetzen. § 27 Abs. 2 Satz 2 bis 5, Abs. 3 und 7 ist anzuwenden.

(3) Reicht das nach Absatz 1 ermittelte Eigenkapital abzüglich der Sonderrücklagen nach § 17 Abs. 4 Satz 3, § 24 Abs. 5 Satz 3 und der vorläufigen Gewinnrücklage nach § 31 Abs. 1 Satz 2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nicht aus, so ist der Fehlbetrag als Ausstehende Einlage auf der Aktivseite vor dem Anlagevermögen gesondert auszuweisen. Für die Einzahlung des Kapitals gelten die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maßgeblichen Vorschriften. Ist die Mindesteinzahlung nicht vollständig bewirkt, gilt der Fehlbetrag als eingefordert. Die Forderung entfällt, wenn der Anteilseigner die Auflösung des Unternehmens innerhalb der Fest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beschließt oder innerhalb dieser Frist die Eröffnung der Gesamtvollstreckung beantragt wird. § 24 Abs. 4 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 19 Abs. 4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st nicht anzuwenden.

(4) Hat der Anteilseigner nach Überführung des Unternehmens in eine private Rechtsform seine Einlage bis zum 30. Juni 1990 geleistet, so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ein Fehlbetrag dadurch ausgeglichen werden, daß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an Stelle der Ausstehenden Einlage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8 Abs. 1 und 2 unter den dortigen Voraussetzungen ein Kapitalentwertungskonto ausgewiesen wird. § 30 ist anzuwenden.

Unterabschnitt 5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privater Unternehmen

§ 27 Neufestsetzung

(1) Dieser Unterabschnitt ist auf alle Unternehmen anzuwenden, auf die § 24 nach dessen Absatz 1 Satz 1 nicht anzuwenden ist, auch wenn sie nach § 1 Abs. 5 als zum 1. Juli 1990 gegründet angesehen werden oder auf sie nach § 4 Abs. 3 das gesamte Vermögen eines Unternehmens als zum 1. Juli 1990 übergegangen gilt. Als Eigenkapital ist der in § 26 Abs. 1 bezeichnete Betrag auszuweisen.

(2) Aktien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haben ihr Grundkapital,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hr Stammkapital in der in der Satzung oder im Gesellschaftsvertrag vorgesehenen Höhe, zumindest aber in Höhe des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neu festzusetzen. Das gezeichnete Kapital kann mit einem höheren Betrag festgesetzt werden,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nach Abzug der Rücklage nach § 31 ein höheres Eigenkapital ergibt. Der übersteigende Betrag ist bei Aktien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der gesetzlichen Rücklage, bei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einer Sonderrücklage zuzuweisen, die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oder zur Kapitalerhöhung aus Gesellschaftsmitteln verwendet werden darf. Eine nach Satz 3 gebildete gesetzliche Rücklage oder Sonderrücklage kann aufgelöst oder in freie Kapitalrücklagen umgegliedert werden,

soweit diese Rücklage nicht zur Deckung des in der Bilanz, in der die Auflösung erfolgen soll, ausgewiesenen Anlagevermögens benötigt wird. In allen anderen Fällen ist die Auflösung oder Umgliederung in freie Kapitalrücklagen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für die jeweilige Rechtsform maßgeblichen Vorschriften über die Kapitalherabsetzung zulässig.

(3) Die Gesellschafter dürfen auf Grund der Neufestsetzung keine Zahlungen erhalten und von der Verpflichtung zur Leistung von Einlagen nicht befreit werden; § 57 Abs. 1 Satz 1, § 62 des Aktiengesetzes, § 30 Abs. 1, § 31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sind auf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gebildeten Rücklagen entsprechend anzuwenden. Dies gilt nicht für Maßnahmen der Treuhandanstalt nach § 25 Abs. 5 und 6.

(4) Offene Handels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haben die Kapitaleinlagen ihrer Gesellschafter, soweit solche im Gesellschaftsvertrag vereinbart sind, und Kommanditgesellschaften zusätzlich die Hafteinlagen ihrer Kommanditisten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Absätze 2 und 3 neu festzusetzen. Das Entnahmerecht der Gesellschafter nach § 122 des Handelsgesetzbuchs darf nicht dazu führen, daß das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 Eigenkapital niedriger wird als die Summe der auf der Aktivseite ausgewiesenen Beträge nach § 31. Persönlich haftende Gesellschafter haben zuviel entnommene Beträge zurückzuerstatten. Führen Zahlungen an Kommanditisten zu einer solchen Minderung des Eigenkapitals, gelten diese als Rückzahlung der Einlage nach § 172 Abs. 4 des Handelsgesetzbuchs.

(5) Genossenschaften haben die Geschäftsguthaben, die Geschäftsanteile und die Haftsummen neu festzusetzen; Absatz 2 Satz 2 und 3 und Ab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6) Bei der Neufestsetzung können die Anteile auf die folgenden Beträge gestellt werden:

1. Aktien auf einen Nennbetrag von fünfzig Deutsche Mark oder auf höhere Nennbeträge, die auf volle hundert Deutsche Mark lauten,
2. die Geschäftsanteile a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auf fünfhundert Deutsche Mark oder jeden höheren Betrag der durch hundert teilbar ist, und zwar unabhängig von der Zahl der Gesellschafter,
3. die Geschäftsanteile bei Genossenschaften auf fünfzig Deutsche Mark oder auf jeden höheren auf volle fünfzig Deutsche Mark lautenden Betrag.

(7) In der Eröffnungsbilanz sind das gezeichnete Kapital und die Rücklagen in der Höhe auszuweisen, wie sie nach der Neufestsetzung bestehen sollen.

(8) Die Absätze 2 bis 7 ist auf ein Unternehmen in einer Rechtsform nach § 1 Abs. 2 Nr. 1 bis 7 jeweils entsprechend anzuwenden, wenn es nach dem für seine Rechtsform maßgeblichen Recht zwischen einem gezeichneten Kapital und Rücklagen unterscheidet; dabei ist jeweils die Regelung für diejenige Rechtsform anzuwenden, die der des Unternehmens am nächsten kommt.

§ 28 Vorläufige Neufestsetzung

(1) An Stelle einer endgültigen Neufestsetzung nach § 27 kann von Unternehmen, d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die Neufestsetzung vorläufig in der Weise durchgeführt werden, daß das in der Schlußbilanz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sgewiesene gezeichnete Kapital (Grundkapital, Stammkapital, Einlagen, Genußrechtskapital, Geschäftsguthaben) mit dem gleichen Betrag in Deutscher Mark in die Eröffnungsbilanz übernommen und der Unterschied, um den der Betrag des gezeichneten Kapitals das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mittelte Eigenkapital übersteigt, als Kapitalentwertungskonto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eingestellt wird.

(2) Der Betrag, der als Kapitalentwertungskonto ausgewiesen wird, darf nicht höher sein als neun Zehntel des gezeichneten Kapitals. Eine Kapitalrücklage darf nicht beibehalten werden. Eine Gewinnrücklage darf beibehalten werden, soweit diese nach § 31 gebildet worden ist und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erwartet werden kann, daß das Unternehmen das Kapitalentwertungskonto aus künftigen Jahresüberschüssen tilgen kann. Das Unternehmen ist verpflichtet, das Kapitalentwertungskonto innerhalb von fünf Geschäftsjahren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auszugleichen. Zur Tilgung sind Werterhöhungen auf Grund der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nach § 36 sowie die Jahresüberschüsse zu verwenden. Eine anderweitige Verwendung ist unzulässig, solange das Kapitalentwertungskonto besteht.

§ 29 Gesellschaftsrechtliche Beziehungen

(1) Das Verhältnis der mit den Anteilen verbundenen Rechte zueinander wird durch die Neufestsetzung nicht berührt.

(2) Vertragliche Beziehungen des Unternehmens zu Dritten, die von der Gewinnausschüttung des Unternehmens, dem Nennbetrag oder dem Wert ihrer Anteile oder ihr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in sonstiger Weise von den bisherigen Kapital- oder Gewinnverhältnissen abhängen, bestimmen sich nach den durch die Neufestsetzung eingetretenen neuen Kapital- oder Gewinnverhältnissen. Dritte brauchen eine durch die Neufestsetzung eintretende Kürzung ihrer Rechte nach Satz 1 nicht gegen sich gelten zu lassen, soweit sie darauf beruht, daß in der Eröffnungsbilanz das gezeichnete Kapital zu den Rücklagen in einem durch §§ 27, 28 nicht bedingten ungünstigeren Verhältnis steht, als dies in der Schlußbilanz der Fall ist.

(3) Wird während des Bestehens eines Kapitalentwertungskontos eine Kapitalerhöhung beschlossen, so ist jedem Anteilseigner auf sein Verlangen ein seinem Anteil an dem bisherigen gezeichneten Kapital entsprechender Teil der neuen Anteile zuzuteilen, es sei denn, daß ein Dritter die Anteile übernommen und sich verpflichtet hat, sie den Anteilseignern zum Bezug anzubieten.

§ 30 Auflösung von Kapitalentwertungskonten

(1) Wird ein Kapitalentwertungskonto nicht innerhalb der in § 28 Abs. 2 Satz 4 bestimmten Frist ausgeglichen, so hat das für Kapitalmaßnahmen zuständige Organ des Unternehmens spätestens bei der Beschlußfassung über die Verwendung des Ergebnisses aus dem Jahresabschluß des fünften Geschäftsjahrs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die Maßnahmen zu beschließen, die erforderlich sind, um das Kapitalentwertungskonto auf andere Weise als durch Tilgung, insbesondere durch Ermäßig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auszugleichen.

(2) Die Maßnahmen gemäß Absatz 1 sind unverzüglich durchzuführen. Ihre Durchführung gilt als endgültige Neufestsetzung. Auf die Ermäßig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sind die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maßgeblichen Vorschriften, von Aktien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die §§ 229 bis 236 des Aktiengesetzes über die vereinfachte Kapitalherabsetzung anzuwenden.

Unterabschnitt 6 Vorläufige Gewinnrücklage

§ 31 Vorläufige Gewinnrücklage

(1) Unternehmen dürfen, wenn s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folgende Maßnahmen treffen, um eine Gewinnrücklage bilden zu können:

1. Die nicht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dürfen mit dem Betrag angesetzt werden, den ein Erwerber des Unternehmens bei dessen Fortführung im Rahmen des Gesamtkaufpreises für diese Vermögensgegenstände ansetzen würde. Ein Geschäfts- oder Firmenwert darf berücksichtigt werden.
2. Die Aufwendungen für die Ingangsetzung und Erweiterung des Geschäftsbetriebs nach § 269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dürfen aktiviert werden. Dazu gehören alle Maßnahmen, die nach dem 1. März 1990 ergriffen wurden und geeignet sind, die Wettbewerbsfähigkeit des Unternehmens herzustellen.
3. Zuschüsse, Beihilfen und andere Vermögensvorteile, die ohne Rückzahlungsverpflichtung von Dritten für Investitionen gewährt werden, dürfen aktiviert werden, sofern der Auftrag für die Investition bis zum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verbindlich erteilt worden ist.

In Höhe der nach Satz 1 Nr. 1 bis 3 aktivierten Beträge ist auf der Passivseite eine Gewinnrücklage zu bilden, die bis zur Tilgung der aktivierten Beträge als vorläufige zu bezeichnen ist.

(2) Der nach Absatz 1 Nr. 1 angesetzte Betrag ist planmäßig innerhalb der Zeit abzuschreiben, die der durchschnittlichen Restnutzungsdauer der nach § 7 neu bewerteten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des Unternehmens entspricht. Fehlen Vergleichszahlen oder sind die Verhältnisse nicht vergleichbar, so ist der Betrag in jedem folgenden Geschäftsjahr zu mindestens einem Viertel durch Abschreibung zu tilgen.

(3) Für die Ingangsetzung und Erweiterung des Geschäftsbetriebs nach Absatz 1 Nr. 2 ausgewiesene Beträge sind in jedem folgenden Geschäftsjahr zu mindestens einem Viertel durch Abschreibung zu tilgen.

(4) Die nach Absatz 1 Nr. 3 aktivierten Beträge sind in den Folgejahren erfolgsneutral umzubuchen, sobald deren Bilanzierungsfähigkeit eingetreten ist. Entfällt der Anspruch nach Absatz 1 Nr. 3 nachträglich, so ist der hierfür angesetzte Betrag unmittelbar mit den Rücklagen zu verrechnen.

(5) Von Absatz 1 Nr. 1 und 2 darf nur insoweit Gebrauch gemacht werden, als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angenommen werden kann, daß das Unternehmen in der Lage sein wird, die sich hieraus ergebenden Aufwendungen und eine Gewinnausschüttung in Höhe der Zinserträge aus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us den laufenden Erträgen ohne Beeinträchtigung des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Eigenkapitals zu decken.

(6) Werden Beträge nach Absatz 1 Nr. 1 oder 2 aktiviert, so dürfen bis zu deren Tilgung durch Abschreibung Gewinne nur ausgeschüttet werden, wenn die nach der Ausschüttung verbleibenden jederzeit auflösbaren Gewinnrücklagen zuzüglich eines Gewinnvortrags und abzüglich eines Verlustvortrags dem angesetzten Betrag mindestens entsprechen. Entstehende Verluste sind in Höhe der Abschreibungen nach den Absätzen 2 und 3 mit der Gewinnrücklage zu verrechnen. § 36 bleibt unberührt.

(7) Beträge nach Absatz 1 sind bei der Berechn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und Ausgleichsverbindlichkeiten nach den §§ 24, 25,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und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 28 Abs. 1 nicht zu berücksichtigen.

(8) Nach Absatz 1 aktivierte Beträge und die in Höhe dieser Beträge gebildete Gewinnrücklage sind gesondert unter entsprechender Bezeichnung auszuweisen und im Anhang zu erläutern.

Abschnitt 4

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 32 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1) Verweisen Verträge, die erst nach dem 30. Juni 1990 zu erfüllen sind, auf Preise, die bisher nach staatlichen Preisvorschriften festgesetzt wurden, aber einer Preisbindung nicht mehr unterliegen, so ist der Preis, wenn eine Preisfestsetzung bis zum 30. Juni 1990 nicht stattgefunden hat, von dem Gläubiger durch Erklärung gegenüber dem zur Zahlung Verpflichteten zu bestimmen. Die getroffene Bestimmung ist für den anderen Teil jedoch nur verbindlich, wenn sie der Billigkeit entspricht. Entspricht sie nicht der Billigkeit, wird die Bestimmung durch Urteil getroffen; das gleiche gilt, wenn die Bestimmung verzögert wird.

(2) (weggefallen)

(3) Erfolgt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die Neubestimmung nach billigem Ermessen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so ist eine Rückstellung nach § 17 Abs. 2 nur zu bilden, wenn zu erwarten ist, daß auch das neu festgesetzte Entgelt zu einem Verlust führen wird.

Abschnitt 5

Verfahren

Unterabschnitt 7

Prüfung

§ 33 Prüfung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jedoch ohne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sind durch einen Prüfer zu prüfen. Hat keine Prüfung stattgefunden, so kan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festgestellt werden. Kapitalgesellschaften und Genossenschaften, deren Bilanzsumme in der Eröffnungsbilanz drei Millionen neu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nicht übersteigt oder die am Stichtag nicht mehr als fünfzig Arbeitnehmer beschäftigen, brauch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nicht prüfen zu lassen, soweit s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oder Rechtsnachfolger eines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s nach § 1 Abs. 5 oder § 4 Abs. 3 sind. Einzelkaufleute und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brauche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prüfen zu lassen, soweit sie nicht Geldinstitute sind.

(2) Ist das Unternehmen in der Zeit vom 1. März 1990 bis zum 30. Juni 1991 gegründet ode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Beschlusses in eine private Rechtsform umgewandelt worden, so kann in die Prüfung der Eröffnungsbilanz auch die Prüfung der Gründung oder Umwandlung einbezogen werden. Dies gilt auch für die Prüfung von Sacheinlagen.

(3)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sind durch einen Prüfer zu prüfen. Hat keine Prüfung stattgefunden, so kann die Konzernöffnungsbilanz nicht festgestellt werden.

(4) Werden die geprüften Unterlagen nach Vorlage des Prüfungsberichts geändert, so hat der Prüfer diese Unterlagen erneut zu prüfen, soweit es die Änderung erfordert. Über das Ergebnis der Prüfung ist zu berichten; der Bestätigungsvermerk ist entsprechend zu ergänzen.

(5) § 317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Gegenstand und Umfang der Prüfung ist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auch das Inventar in die Prüfung einzubeziehen ist. Bei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ist außerdem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zu prüfen.

(6) Unbeschadet der Regelung in Absatz 1 Satz 3 brauchen Genossenschaften jeder Art einschließlich kooperativer Einrichtungen, die nach dem für sie maßgeblichen Recht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ufzulösen sind, wenn sie nicht umgewandelt werden, und die in ihrer Eröffnungsbilanz eine Bilanzsumme von nicht mehr als einhundertfünfundzwanzig Millionen Deutsche Mark ausweisen oder am Bilanzstichtag nicht mehr als fünftausend Arbeitnehmer beschäftigen und d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die Eröffnungsbilanz nicht prüfen zu lassen, wenn sie die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d des Anhangs auf eine Person übertragen haben, die als Wirtschaftsprüfer oder vereidigter Buchprüfer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öffentlich bestellt oder als Prüfungsgesellschaft anerkannt oder als Steuerberater oder als Steuerbevollmächtigter nach dem Steuerberatungsgesetz bestellt oder als Steuerberatungsgesellschaft anerkannt worden ist oder als Vereinigung zur Führung der Bezeichnung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 befugt oder Fachanwalt für Steuerrecht ist. Die Pflicht zur Prüfung entfällt jedoch nur, wenn die aufstellende Person schriftlich erklärt, daß

1. die Eröffnungsbilanz auf einer ordnungsgemäßen Inventur beruht oder die Inventur nach § 3a nachgeholt worden ist und
2.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von ihr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so aufgestellt worden ist, daß diese Unterlagen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im Sinne des § 264 Abs. 2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vermitteln.

Der Eröffnungsbilanz ist die Erklärung nach Satz 2 und eine Erklärung der Geschäftsführung beizufügen, aus der sich ergibt, daß sie der aufstellenden Person alle Unterlagen vorgelegt und alle Auskünfte erteilt hat, die für die Aufstellung erforderlich waren. § 323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Haftung bei Fahrlässigkeit ist entsprechend anzuwenden. Die Sätze 1 bis 3 sind entsprechend auf die in § 34 Abs. 2 bezeichneten Prüfungsverbände anzuwenden.

§ 34 Durchführung der Prüfung

(1) Prüfer können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tellte und vereidigte Wirtschaftsprüfer und anerkannte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sei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eren Bilanzsumme in der Eröffnungsbilanz fünfzehn Millionen fünf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nicht übersteigt oder die a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nicht mehr als zweihundertfünfzig Arbeitnehmer beschäftigen, können ihre Eröffnungsbilanz auch von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tellten vereidigten Buchprüfern oder anerkannten Buchprüfungsgesellschaften prüfen lassen.

(2) Ist das Unternehmen eine Genossenschaft, so sind unter den folgenden Voraussetzungen die nach § 33 vorgeschriebenen Prüfungen statt von den in Absatz 1 Satz 1 bezeichneten Personen von einem Prüfungsverband durchzuführen, dem das Prüfungsrecht nach § 6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verliehen worden ist. Der Prüfungsverband ist nur prüfungsberechtigt, sofern mehr als die Hälfte der Mitglieder seines Vorstands Wirtschaftsprüfer nach Absatz 1 Satz 1 ist. Hat der Prüfungsverband nur zwei Vorstandsmitglieder, so muß einer von ihnen Wirtschaftsprüfer nach Absatz 1 Satz 1 sein. Hat der Verband, dem die Genossenschaft als Mitglied angehört, eine Vereinbar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Prüfungen mit einem Prüfungsverba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geschlossen, so ist dieser zuständig. § 55 Abs. 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bleibt unberührt.

(3) Ist das Unternehmen eine Sparkasse, so dürfen die nach § 33 vorgeschriebenen Prüfungen abweichend von § 31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nur von der Prüfungsstelle eines Sparkassen- und Giroverbands durchgeführt werden. Die Prüfung darf von der Prüfungsstelle jedoch nur durchgeführt werden, wenn der Leiter der Prüfungsstelle die Voraussetzungen des § 319 des Handelsgesetzbuchs erfüllt. Außerdem muß sichergestellt sein, daß der Prüfer die Prüfung unabhängig von den Weisungen der Organe des Sparkassen- und Giroverbands durchführen kann.

(4) Auf die Bestellung des Prüfers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 318 des Handelsgesetzbuchs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as geschäftsführende Organ des Unternehmens den Prüfer vorläufig bestellen kann, insbesondere um seine Anwesenheit bei der Inventur zu erreichen. Die Bestätigung der nach § 318 des Handelsgesetzbuchs zur Wahl des Prüfers berufenen Personen ist unverzüglich nachzuholen.

(5) Auf die Prüfung sind die §§ 317, 318, 319 Abs. 2, 3, §§ 320 bis 323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Unterabschnitt 8

Feststellung und Berichtigung

§ 35 Feststellung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owie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bedürfen der Feststellung. Die für die Aufstellung dieser Unterlag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ch bei der Feststellung anzuwenden. Die Feststellung ist bei Einzelunternehmen vom Inhaber, bei anderen Unternehmen von den Anteilseignern oder dem sonst zuständigen Organ in der für Beschlüßfassungen nach der Rechtsform des Unternehmens vorgeschriebenen Form unverzüglich nach Vorlage der Unterlagen herbeizuführ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zwölften Monats und von kleinen Unternehmen nach § 4 Abs. 1 Satz 2 spätestens vor Ablauf des fünfzehn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spätestens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nach § 21 Abs. 1 Satz 1 festzustellen. Die Gesamteröffnungsbilanz und der Gesamtanhang sind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nach § 21 Abs. 5 festzustellen. Das Geschäftsführungsorgan hat zu diesem Zweck die festzustellenden Unterlagen unverzüglich nach ihrer Aufstellung und den Prüfungsbericht unverzüglich nach seiner Vorlage dem zur Feststellung berufenen Organ vorzulegen. Hat das Unternehmen einen Aufsichtsrat, so hat der Aufsichtsrat die Unterlagen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171 des Aktiengesetzes zu prüfen und über das Ergebnis der Prüfung schriftlich zu berichten.

(2) Die in Absatz 1 Satz 1 bezeichneten Unterlagen können nicht festgestellt werden, wenn der Bestätigungsvermerk versagt worden ist. Die Eröffnungsbilanz oder die Konzernöffnungsbilanz ist nichtig, wenn sie bei bestehender Prüfungspflicht nicht in der vorgeschriebenen Form geprüft oder nicht festgestellt worden ist. Werden die Unterlagen nach Prüfung geändert, so wird ein Beschluß über die Feststellung erst wirksam, wenn auf Grund der erneuten Prüfung ein hinsichtlich der Änderungen uneingeschränkter Bestätigungsvermerk erteilt worden ist.

(3) Das Geschäftsführungsorgan hat dem Feststellungsorgan sogleich mit den festzustellenden Unterlagen einen Bericht vorzulegen, in dem die Vorschläge zur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und die wesentlichen Umstände darzulegen sind, die für die Bewert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für die Vorschläge zur Neufestsetzung maßgebend gewesen sind, soweit sich diese Erläuterungen nicht aus dem Anhang oder dem Konzernanhang ergeben.

(4) Wird die Eröffnungs- oder Konzernöffnungsbilanz vor Ablauf einer Frist festgestellt, die die Berücksichtigung von Bilanz- oder Wertansätzen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vorschreibt oder zuläßt, so ist eine sofortige Änderung nicht erforderlich. Die sich ergebenden Berichtigungen können nachträglich im Rahmen der Aufstellung des nächstfolgenden Abschlusses nach § 36 berücksichtigt werden.

§ 36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1)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späterer Jahresabschlüsse, daß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onderposten in der Eröffnungsbilanz nicht oder mit einem zu niedrigen Wert oder Schulden oder Sonderposten zu Unrecht oder mit einem zu hohen Wert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in der späteren Bilanz der unterlassene Ansatz nachzuholen oder der Wertansatz zu berichtigen, wenn es sich um einen wesentlichen Betrag handelt; dies gilt auch, wenn die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chulden am Bilanzstichtag nicht mehr vorhanden

sind, jedoch nur für den auf die Vermögensänderung folgenden Jahresabschluß. Der Gewinn ist in eine Sonderrücklage nach § 27 Abs. 2 Satz 3, bei Aktiengesellschaften vorweg in die gesetzliche Rücklage bis zu deren vorgeschriebenen Höhe, einzustellen, soweit er nicht mit einem Verlust aus einer Verminderung des Sonderverlustkontos aus Rückstellungsbildung nach § 17 Abs. 4 oder d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1 oder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nach § 24 Abs. 5 oder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oder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 28 Abs. 1 oder einem Verlust aus der Erhöh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en nach § 25 Abs. 1 zu verrechnen ist.

(2)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späterer Jahresabschlüsse, daß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onderposten in der Eröffnungsbilanz zu Unrecht oder mit einem zu hohen Wert oder Schulden oder Sonderposten nicht oder mit einem zu geringen Wert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in der späteren Bilanz der Wertansatz zu berichtigen oder der unterlassene Ansatz nachzuholen, wenn es sich um einen wesentlichen Betrag handelt; dies gilt auch, wenn diese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chulden am Bilanzstichtag nicht mehr vorhanden sind, jedoch nur für den auf die Vermögensänderung folgenden Jahresabschluß. Der Verlust ist offen mit dem Eigenkapital, vorweg mit dem Jahresergebnis und den Gewinnrücklagen, zu verrechnen, soweit er nicht mit dem Gewinn aus einer Erhöhung des Sonderverlustkontos aus Rückstellungsbildung nach § 17 Abs. 4 oder d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1 oder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nach § 24 Abs. 5 oder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oder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 28 Abs. 1 oder dem Gewinn aus einer Verminder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nach § 25 Abs. 1 zu verrechnen ist.

(3) Die Absätze 1 und 2 sind auch anzuwenden, wenn ein für die Eröffnungsbilanz eingeräumtes Wahlrecht nachträglich mit Wirkung für diese abweichend ausgeübt wird. Gewinne nach Absatz 1 können mit Verlusten nach Absatz 2 nur innerhalb des Eigenkapitals verrechnet werden. Absatz 1 ist auch anzuwenden, wenn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eine in der Eröffnungsbilanz berücksichtigte Schuld erlassen, von einem Dritten mit befreiender Wirkung unentgeltlich übernommen oder von diesem wirtschaftlich getragen oder in eine nachrangige Schuld nach § 16 Abs. 3 oder § 17 Abs. 5 Satz 4 umgewandelt wird. Beruht die Wert- oder Bestandsänderung auf Maßnahmen der Treuhandanstalt oder ist sie durch Verwaltungsakte zur Abwehr von Gefahren und zur Beseitigung von Beeinträchtigungen im Sinne des § 17 Abs. 2a Satz 1 oder Vereinbarungen mit der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 veranlaßt, so gelten diese Maßnahmen als werterhellend im Sinne der Absätze 1 und 2.

(4)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bis 3 gilt die Eröffnungsbilanz als geändert. Die Absätze 1 bis 3 sind letztmals auf Jahresabschlüsse für Geschäftsjahre anzuwenden, die im Jahre 1994 und, wenn die Berichtigung im Zusammenhang mit Umweltbeeinträchtigungen steht, im Jahre 2000 enden; beruht die Berichtigung auf einer nach dem 31. Dezember 1994 wirksam gewordenen Abwicklung vermögensrechtlicher Angelegenheiten in Ausführung der Bestimmungen des Einigungsvertrages und der zu dessen Vollzug erlassenen Vorschriften, insbesondere auf Maßnahmen der Vermögenszuordnung, Vermögensrückgabe oder Sachenrechtsbereinigung und damit zusammenhängender Vermögensübertragungen auf die Unternehmen oder auf Maßnahmen in Vollzug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so sind die Absätze 1 bis 3 bis zur Durchführung der jeweiligen Maßnahme anzuwend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nach den §§ 24, 25 und 26 Abs. 3 können nicht mehr geändert werden, soweit sie im Zeitpunkt der Berichtigung auf eine dritte Person übergegangen sind oder Sicherungsrechte dritter Personen dadurch beeinträchtigt werden oder wenn die die Mehrheit der Anteile an dem Unternehmen auf eine andere Person oder einen Rechtsnachfolger auf Grund des § 23a Abs. 1 und 2 des Treuhandgesetzes außerhalb des Bereiches der Treuhandanstalt und des von ihr verwalteten Bundesvermögens übertragen worden ist.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nach den §§ 24, 25 und 26 Abs. 3 oder den §§ 40, 41 können letztmals in den Jahresabschlüssen geändert werden, die zum 31. Dezember 1994 aufgestellt werden. Führt eine in einer späteren Bilanz erfolgte Berichtigung dazu, daß eine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oder § 40 nicht oder nicht in der ausgewiesenen Höhe entstanden wäre, so ist ein der Berichtigung entsprechender Betrag von demjenigen, der die Berichtigung durchgeführt hat, an den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zu zahlen; ist der Schuldner dieser Zahlungsverpflichtung noch Gläubiger d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kann er unabhängig von der Fälligkeit der Ausgleichsforderung die Verrechnung verlangen. Satz 5 ist unbeschadet des § 17 Abs. 4a nicht anzuwenden, wenn die Berichtigung nach Satz 3 ausgeschlossen ist.

(5) Die Absätze 1 bis 4 sind auf die Konzernöffnungsbilanz entsprechend anzuwenden.

(6) Die Absätze 1 bis 4 gelten auch für die übernommenen Vermögensgegenstände, Schulden und Sonderposten einschließlich der Verfügungsbeschränkungen sowie das sich daraus ergebende Eigenkapital in den Jahresabschlüssen derjenigen Unternehmen, die nach dem 1. Juli 1990 durch Gründung, Umwandlung, Verschmelzung, Spaltung oder Entflechtung aus den in § 1 Abs. 1 bis 3 bezeichneten Unternehmen unter Fortführung der Buchwerte aus deren D-Markeröffnungsbilanz hervorgegangen sind.

Unterabschnitt 9 Offenlegung

§ 37 Offenlegung

(1) Unternehmen hab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sowie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n Konzernanhang innerhalb eines Monats nach Ablauf der jeweiligen Feststellungsfrist offenzulegen, wenn sie nach ihrer Rechtsform oder wegen ihres Geschäftszweigs zur Offenlegung ihrer Jahresabschlüsse verpflichtet sind oder wenn sie in ihrer Eröffnungsbilanz oder in ihrer Konzernöffnungsbilanz eine Bilanzsumme von mehr als einhundertfünfundzwanzig Millionen Deutsche Mark ausweisen und am Bilanzstichtag mehr als fünftausend Arbeitnehmer beschäftigen. Die §§ 325, 326, 328 und 339 des Handelsgesetzbuch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auf die Bestimmung der Größenmerkmale ist § 5 Abs. 2 anzuwenden.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braucht nicht offengelegt zu werden. § 4 des Gesetzes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Juni 1990 (GBl. I Nr. 34 S. 357) ist nicht anzuwenden.

(2) Das Registergericht prüft bei der Einreichung der Unterlagen, ob die Unterlagen vollzählig sind und, sofern vorgeschrieben, fristgerecht bekanntgemacht worden sind.

(3) Ist die Prüfung der Gründung, Umwandlung oder von Sacheinlagen in die Prüfung der Eröffnungsbilanz einbezogen worden, so kann das Gericht unterstellen, daß die Wertansätze für Vermögensgegenstände in der Eröffnungsbilanz deren tatsächlichem Wert entsprechen, wen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einen uneingeschränkten Bestätigungsvermerk erhalten haben.

(4) Unternehmen, die nach den bis zum 30. Juni 1990 gültigen Rechtsvorschriften gegenüber dem Statistischen Am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ichtspflichtig waren, haben die D-Markeröffnungsbilanz unverzüglich nach ihrer Feststellung der Treuhandanstalt in zweifacher Ausfertigung einzureichen.

Abschnitt 6 Geschäftszweigbezogene Vorschriften

Unterabschnitt 10a Vorschriften fü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 38 Anwendungsbereich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beachten, soweit in diesem Unterabschnit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e dürfen die in diesem Gesetz größenabhängig zugelassenen Erleichterungen nicht in Anspruch nehmen. § 19 Abs. 3 Nr. 1 Buchstabe a dieses Gesetzes und § 26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sind auf Geldinstitute nicht anzuwenden. § 1 Abs. 5 Satz 2 und 3, § 4 Abs. 3 Satz 3 sind auf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nicht anzuwenden.

(2) Geldinstitute sind Unternehmen, die vor dem 1.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fugt Bankgeschäfte gemäß § 1 Abs.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betrieben haben; die Befugnis kann auf Gesetz, Verordnung, behördlicher Anordnung oder behördlicher Erlaubnis beruhen.

(3) Außenhandelsbetriebe sind Unternehmen, die vor dem 1.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Auftrag staatlicher Stellen im Rahmen des Außenhandels- und Valutamonopols Geschäfte mit Unternehmen oder Ländern außerhalb des Währungsgebiets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ieben haben. Dazu rechnen auch Unternehmen, die den Geschäftsbetrieb von Außenhandelsbetrieben ganz oder teilweise zum Zwecke der Abwicklung übernommen haben, hinsichtlich des abzuwickelnden Vermögens.

(4)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de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ach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festzustellen. Bis zu diesem Zeitpunkt können Maßnahmen nach § 1 Abs. 5 Satz 1 oder § 4 Abs. 3 Satz 1 und 2 berücksichtigt werden.

§ 39 Eröffnungsbilanz

(1) Geldinstitute haben abweichend von § 247 Abs. 1, §§ 251, 265 Abs. 5 bis 7, §§ 266 bis 268 des Handelsgesetzbuchs und unbeschadet einer weiteren Gliederung die Eröffnungsbilanz gemäß der Verordnung über Formblätter für die Gliederung des Jahresabschlusses von Kreditinstitut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4. September 1987 (BGBl. I S. 2169) aufzustellen, und zwar

1. Geldinstitute, die Kapitalgesellschaft sind, nach dem Muster 1 dieser Verordnung für die Bilanz,
2. Geldinstitute, die eingetragene Genossenschaft sind, nach dem Muster 2 dieser Verordnung für die Bilanz,
3. Geldinstitute, die Sparkasse sind, und andere Geldinstitute des öffentlichen Rechts nach Mustern, die durch Änderung dieser Verordnung festgelegt werden.

(2) Geldinstitute haben in der Eröffnungsbilanz Pauschalwertberichtigungen nach § 13 Abs. 3 auf Forderungen aus Bankgeschäften in Höhe von 1 vom Hundert und auf Eventualforderungen des Bankgeschäfts aus Bürgschaften und sonstigen Gewährleistungen in Höhe von 0,5 vom Hundert vom Gesamtbetrag der Forderungen an Kunden abzusetzen, soweit diese sich nicht gegen eine Gebietskörperschaft, eine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eine Anstalt oder ein Geldinstitut im Währungsgebiet der Deutschen Mark richten oder von ihnen verbürgt sind.

(3) Die Beibehaltung der Pauschalwertberichtigung in künftigen Bilanzen richtet sich nach den allgemeinen Bewertungsgrundsätzen.

(4) Abweichend von § 16 Abs. 1 sind die nachstehend bezeichneten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Verbindlichkeiten der Geldinstitute,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zurechnen,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natürlichen Personen mit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die nach dem 1. Juli 1976 geboren sind, bis zu zweitausend Mark,
- die zwischen dem 2. Juli 1931 und dem 1. Juli 1976 geboren sind, bis zu viertausend Mark,
- die vor dem 2. Juli 1931 geboren sind, bis zu sechstausend Mark,

sofern sie einen entsprechenden Antrag gestellt haben. Ferner sind die nach dem 31. Dezember 1989 begründeten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natürlichen oder juristischen Personen oder Stellen, deren Wohnsitz sich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findet, in der Weise umzustellen, daß für dr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gutgeschrieben wird, sofern diese Personen oder Stellen einen entsprechenden Antrag gestellt haben.

§ 40 Ausgleichsforderungen

(1)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wird, soweit ihre Vermögenswerte in Anwendung der Bewertungsvorschriften des Unterabschnitts 2 dieses Gesetzes zur Deckung der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lungen nicht ausreich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eine verzinsliche Forderung gege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zugeteilt. Zinseszinsen werden nicht gewährt.

(2) Für Geldinstitute ist die Forderung in der Höhe anzusetzen, daß die Vermögenswerte ausreichen, um die in Absatz 1 genannten Schulden zu decken und ein Eigenkapital in der Höhe auszuweisen, daß es mindestens vier vom Hundert der Bilanzsumme und die Auslastung des gemäß § 10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vo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erlassenen Grundsatzes I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9. Dezember 1985 (Bundesanzeiger Nr. 239 vom 24. Dezember 1985 S. 15302) höchstens das Dreizehnfache beträgt.

(3) Für Außenhandelsbetriebe ist die Ausgleichsforderung in der Höhe anzusetzen, daß die Vermögenswerte ausreichen, um die in Absatz 1 bezeichneten Schulden zu decken.

(4) § 36 ist mit der Maßgabe entsprechend anzuwenden, daß es nicht auf die Wesentlichkeit ankommt. § 36 Abs. 4 Satz 3 ist nicht anzuwenden.

(5) § 24 Abs. 2 Satz 1 ist anzuwenden.

§ 41 Ausgleichsverbindlichkeiten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haben in ihre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usgleichsverbindlichkeiten) in der Höhe einzustellen, in der bei Geldinstituten das Eigenkapital die in § 40 Abs. 2 genannten Grenzen und bei Außenhandelsbetrieben die Vermögenswerte die Schulden übersteigen.

(2) § 24 Abs. 2 Satz 1 und § 40 Abs. 1 Satz 2 und Absatz 4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 42 Vergleichende Darstellung

Geldinstitute haben in der vergleichenden Darstellung nach § 20 außerdem anzugeben,

1. für welche Forderungen über zehntausend Deutsche Mark sie zum Stichtag 1. Juli 1990 Einzelwertberichtigungen gebildet oder Abschreibungen vorgenommen haben; die abgesetzten Beträge sind anzugeben und zu begründen;
2. die Anzahl der Konten, auf denen Guthab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a) bis zu zwei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
 - b) bis zu vier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
 - c) bis zu sechs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gutgeschrieben wurden;
3. den Gesamtbetrag der Guthab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die ein Umstellungsantrag noch gestellt werden kann.

§ 43 Prüfung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oder des öffentlichen Rechts können abweichend von § 34 Abs. 1 nur von einem Wirtschaftsprüfer oder eine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geprüft werden, soweit sie nicht Sparkassen sind.

(2) Die Prüfung erstreckt sich auch auf die Frage, ob bei der nachträglichen Umstellung von Kontoguthaben natürlicher Personen die Voraussetzungen gemäß Artikel 5 Abs. 7 der Anlage I zum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di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vorlagen.

Unterabschnitt 10b

Abführungspflicht fü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 43a Abführungspflicht für wertberichtigte Forderungen

(1) Ein Geldinstitut ist verpflichtet, Zins- und Tilgungsbeträge, die der Schuldner oder ein Dritter nach dem 31. Dezember 1994 und vor dem 1. Januar 2030 auf ein ihm vor dem 1. Juli 1990 gewährtes Darlehen leistet,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bzuführen, wenn das Geldinstitut hierfür in seiner D-Markeröffnungsbilanz eine Wertberichtigung vorgenommen hat. Wurde die Forderung nur teilweise wertberichtigt, sind Zins- und Tilgungsbeträge nur insoweit abzuführen, als sie nicht zur Bedienung des werthaltigen Teils der Forderung dienen.

(2) Abzuführen sind auch Zins- und Tilgungsbeträge im Sinne des Absatzes 1, die der Schuldner oder ein Dritter auf Darlehensforderungen geleistet hat, die das Geldinstitut wegen einer Rangrücktrittsvereinbarung gemäß § 13 Abs. 4 mit dem Schuldner nicht in seine D-Markeröffnungsbilanz aufgenommen hat.

§ 43b Abführungspflicht für wertberichtigte Schulden

Ist eine in der D-Markeröffnungsbilanz berücksichtigte Verbindlichkeit oder Rückstellung nach dem 31. Dezember 1994 und vor dem 1. Januar 2030 ganz oder teilweise aufgelöst worden, weil die Schuld erloschen oder mit einer

Inanspruchnahme nicht mehr zu rechnen ist, hat das Geldinstitut einen der Berichtigung entsprechenden Betrag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bzuführen. Der Betrag ist vom 1. Juli 1990 an bis zu dem Tag der Abführung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mit dem für Ausgleichsforderungen jeweils geltenden Zinssatz zu verzinsen.

§ 43c Fälligkeit

Eingehende Zins- und Tilgungsbeträge nach § 43a sind innerhalb von sechs Wochen vom Eingang der Zahlung an gerechnet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zu zahlen. Abführungen nach § 43b sind innerhalb von sechs Wochen vom Zeitpunkt der Feststellung des Jahresabschlusses an gerechnet, in dem die Berichtigung vorgenommen wird, zu leisten.

§ 43d Prüfung der Abführung

Die Einhaltung der Abführung ist von dem für die Prüfung des Jahresabschlusses bestellten Prüfer im Rahmen der Prüfung des Jahresabschlusses zu prüfen. Er hat hierauf im Prüfungsbericht nach § 321 des Handelsgesetzbuchs einzugehen.

§ 43e Außenhandelsbetriebe

Die Vorschriften dieses Unterabschnitts sind auf Außenhandelsbetriebe entsprechend anzuwenden.

Unterabschnitt 11 Vorschriften für Versicherungsunternehmen

§ 44 Anwendungsbereich

(1)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beachten, soweit in diesem Unterabschnit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e dürfen die in diesem Gesetz größenabhängig zugelassenen Erleichterungen nicht in Anspruch nehmen. Die §§ 55, 56 Abs. 1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sind nicht anzuwenden.

(2)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Unternehmen, die den Betrieb von Versicherungsgeschäften zum Gegenstand haben und nicht Träger der Sozialversicherung sind. Dazu gehören auch Unternehmen, die nicht der Versicherungsaufsicht unterliegen oder keine eigene Rechtspersönlichkeit haben. Die Vorschriften über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auch auf Unternehmen anzuwenden, die keine Erlaubnis zum Geschäftsbetrieb als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oder die sich in Abwicklung befinden.

§ 45 Eröffnungsbilanz

(1)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abweichend von § 265 Abs. 6, 7, §§ 266 bis 268 des Handelsgesetzbuchs und unbeschadet einer weiteren Gliederung die Eröffnungsbilanz gemäß der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legung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vom 11. Juli 1973, zuletzt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23. Dezember 1986 (BGBl. 1987 I S. 2), aufzustellen.

(2)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die Rückstellungen gemäß § 56 Abs. 3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zu bilden. § 56 Abs. 4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ist anzuwenden. § 17 Abs. 4 ist auch auf versicherungstechnische Rückstellungen mit Ausnahme der Beitragsüberträge anzuwenden.

(3)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im Anhang zusätzlich die in § 12 Nr. 3 der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legung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vom 11. Juli 1973 vorgeschriebenen Angaben zu machen.

§ 46 Prüfung. Einreichung

(1) Versicherungsunternehmen können abweichend von § 34 Abs. 1 nur von einem Wirtschaftsprüfer oder eine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geprüft werden.

(2) Die D-Markeröffnungsbilanz, der Anhang sowie die Schlußbilanz zum 30. Juni 1990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elf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spätestens vor Ablauf des siebzehnten Monats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in zweifacher Ausfertigung einzureichen. Der Bericht des Prüfers über die Prüfung nach § 33 Abs. 1 Satz 1 ist spätestens vor Ablauf des

zwölf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er Bericht über die Prüfung nach § 33 Abs. 3 Satz 1 spätestens vor Ablauf des neunzehnten Monats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in zweifacher Ausfertigung einzureichen.

Abschnitt 7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Zwangsgelder

§ 47 Strafvorschriften

(1) Die Strafvorschriften der §§ 331 bis 333 des Handelsgesetzbuchs sind auf die Eröffnungsbilanz, den Anhang, die Konzernöffnungsbilanz, den Konzernanhang und die nach diesem Gesetz zu bestellenden Prüfer entsprechend anzuwenden. Satz 1 gilt auch für nicht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betriebene Unternehmen.

(2) § 331 des Handelsgesetzbuchs ist darüber hinaus auch anzuwenden auf die Verletzung von Pflichten durch den Geschäftsleiter (§ 1 Abs. 2 Satz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eines nicht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betriebenen Geldinstituts, durch den Inhaber eines in der Rechtsform des Einzelkaufmanns betriebenen Geldinstituts oder durch den Geschäftsleiter im Sinne des § 53 Abs. 2 Nr.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 48 Bußgeldvorschrif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als Mitglied des vertretungsberechtigten Organs oder des Aufsichtsrats eines Unternehmens oder als Geschäftsleiter im Sinne des § 1 Abs. 2 Satz 1 oder des § 53 Abs. 2 Nr.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oder als Inhaber eines in der Rechtsform des Einzelkaufmanns betriebenen Unternehmens

1. bei der Aufstellung ode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oder des Anhangs einer Vorschrift
 - a) des § 4 Abs. 2 Satz 1 oder 2 oder des § 5 Abs. 1 Satz 1 in Verbindung mit § 243 Abs. 1 oder 2, §§ 244, 245, 246, 247 Abs. 1 oder 2, §§ 248, 249 Abs. 1 Satz 1 oder Abs. 3, § 250 Abs. 1 Satz 1 oder Abs. 2 oder § 25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 b) des § 5 Abs. 1 Satz 1 in Verbindung mit § 253 Abs. 1 Satz 2, Abs. 2 Satz 1, 2 oder 3 oder Abs. 3 Satz 1 oder 2, § 255 Abs. 1 oder 2 Satz 1, 2 oder 6 des Handelsgesetzbuchs oder der §§ 6 bis 18 über die Bewertung,
 - c) des § 5 Abs. 1 Satz 2 in Verbindung mit § 265 Abs. 3 bis 8, §§ 266, 268 Abs. 3 bis 7 oder § 272 des Handelsgesetzbuchs oder des § 39 Abs. 1 oder 2 oder des § 45 über die Gliederung oder
 - d) des § 19 Abs. 1 bis 3, der §§ 20 oder 22 über die im Anhang zu machenden Angaben,
 2. bei der Aufstellung der Konzernöffnungsbilanz oder des Konzernanhangs einer Vorschrift
 - a) des § 21 Abs. 3 über den Konsolidierungskreis,
 - b) des §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den §§ 5 bis 19 oder § 297 Abs. 2 oder 3 oder § 298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dieser in Verbindung mit § 243 Abs. 1 oder 2, §§ 244, 245, 246, 247 Abs. 1 oder 2, §§ 248, 249 Abs. 1 Satz 1 oder Abs. 3, § 250 Abs. 1 Satz 1 oder Abs. 2 oder § 25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 c) des §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 300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Konsolidierungsgrundsätze oder das Vollständigkeitsgebot,
 - d) des §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 311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dieser in Verbindung mit § 312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Behandlung assoziierter Unternehmen, oder
 - e) des § 22 über die im Konzernanhang zu machenden Angaben,
 3. bei der Offenlegung, Veröffentlichung oder Vervielfältigung einer Vorschrift des § 37 Abs. 1 Satz 1 in Verbindung mit § 328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oder
 4. der Vorschrift des § 37 Abs. 4 über die Einreichung der D-Markeröffnungsbilanz
- zuwiderhandelt.

(2) Ordnungswidrig handelt auch, wer zu einer Eröffnungsbilanz oder einem Anhang oder einer Konzernöffnungsbilanz oder einem Konzernanhang, die auf Grund gesetzlicher Vorschriften zu prüfen sind,

einen Vermerk nach § 322 des Handelsgesetzbuchs erteilt, obwohl nach § 34 Abs. 5 in Verbindung mit § 319 Abs. 2, 3, 5, § 319a Abs. 1 Satz 1,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er oder nach § 34 Abs. 5 in Verbindung mit § 319 Abs. 4, auch in Verbindung mit § 319a Abs. 1 Satz 2, oder § 319a Abs. 1 Satz 4 des Handelsgesetzbuchs die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oder Buchprüfungsgesellschaft, für die er tätig wird, nicht Prüfer sein darf.

(3)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r Geldbuße bis zu fünfzigtausend Euro geahndet werden.

(4) Verwaltungsbehörde im Sinn des § 36 Abs. 1 Nr. 1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ist in den Fällen der Absätze 1 und 2 das Bundesamt für Justiz.

§ 49 Festsetzung von Ordnungsgeld

Gegen Mitglieder des vertretungsberechtigten Organs, bei Einzelunternehmen gegen den Inhaber, die § 37 dieses Gesetzes in Verbindung mit § 325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Pflicht zur Offenlegung der Eröffnungsbilanz oder des Anhangs oder der Konzernöffnungsbilanz oder des Konzernanhangs nicht befolgen, ist wegen des pflichtwidrigen Unterlassens der Offenlegung vom Bundesamt für Justiz ein Ordnungsgeld nach § 335 des Handelsgesetzbuchs festzusetzen. § 335 Abs. 1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ist entsprechend anzuwenden.

Abschnitt 8 Steuern. Gebühren

§ 50 Steuerliche Eröffnungsbilanz und Folgewirkungen

(1) Steuerpflichtige, die Rechtsträger eines Unternehmens nach § 1 sind,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auch für die steuerrechtliche Gewinnermittlung zu befolgen. Ein Steuerpflichtiger, der Rechtsträger eines Unternehmens ist, das nach § 1 Abs. 5 als zum 1. Juli 1990 entstanden angesehen wird, ist mit dem Unternehmen vom 1. Juli 1990 an für die Steuern vom Einkommen und Ertrag steuerpflichtig. Wird die Übertragung von Vermögensgegenständen oder Schulden nach § 4 Abs. 3 bereits in der Eröffnungsbilanz der betroffenen Unternehmen zum 1. Juli 1990 berücksichtigt, so gilt dies auch für die Steuerpflicht der Rechtsträger der betroffenen Unternehmen.

(2) Zum 1. Juli 1990 ist eine steuerliche Eröffnungsbilanz aufzustellen, die, abgesehen von den folgenden Abweichungen, der handelsrechtlichen Eröffnungsbilanz entsprechen muß. Ein nach § 9 Abs. 3 oder § 31 Abs. 1 Nr. 1 Satz 2 und Nr. 2 und 3 gebildeter Aktivposten ist nicht anzusetzen; als betriebsgewöhnliche Nutzungsdauer eines Aktivpostens nach § 31 Abs. 1 Nr. 1 Satz 1 gilt ein Zeitraum von 15 Jahren. § 11 Abs. 1 Satz 1 ist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er Beteiligungsbuchwert dem ausgewiesenen anteiligen Eigenkapital in der steuerlichen Eröffnungsbilanz des Unternehmens entspricht, an dem die Beteiligung besteht. § 5 Abs. 2, 3 und 5 des Einkommensteuergesetzes ist anzuwenden. Rückstellungen nach § 5 Abs. 4 des Einkommensteuergesetzes und Rückstellungen nach § 249 Abs. 1 Satz 2 Nr. 1, Satz 3 und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dürfen nicht gebildet werden. § 9 Abs. 2 Satz 3 und § 10 Abs. 1 Satz 2 zweiter Halbsatz und Absatz 2 Satz 2 sind nicht anzuwenden. Auf die Bildung von Pensionsrückstellungen ist § 54 Abs. 1 bis 3 und 5 entsprechend anzuwenden.

(3) Die Berichtigung von Ansätzen nach § 36 führt zu einer Berichtigung der steuerlichen Eröffnungsbilanz und etwaiger Folgebilanzen. Sind bereits Steuerbescheide erlassen worden, so sind sie zu ändern, soweit die Berichtigung von Bilanz- oder Wertansätzen zu einem geänderten Gewinn oder Verlust führt oder sich auf die Feststellung von Einheitswerten auswirkt. In den Fällen des § 36 Abs. 4 Satz 2 beginnt die Festsetzungsfrist mit Ablauf des Kalenderjahres, in dem die Berichtigung der steuerlichen Eröffnungsbilanz und etwaiger Folgebilanzen erfolgt.

(4) Beträge, die zum Ausgleich ein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oder § 28 Abs. 1 verwendet werden, dürfen bei der steuerrechtlichen Gewinnermittlung nicht abgezogen werden.

(5) Auf Steuerpflichtige, die freiwillig Bücher führen und regelmäßig Abschlüsse machen, ist Absatz 1 bis 4 entsprechend anzuwenden.

§ 51 Umstellungsbedingte Vermögensänderungen

(1) Die aus der Eröffnungsbilanz und der Neufestsetzung nach § 26 Abs. 2 bis 4, §§ 27, 28, 30 sich ergebenden zahlenmäßigen Veränderungen im Vermögen der in § 50 Abs. 1 oder 5 bezeichneten Steuerpflichtigen sowie deren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wirken sich auf die Steuern vom Einkommen und Ertrag nicht aus. Dies gilt

insbesondere für die Bildung von Rücklagen oder die Auflösung bisheriger Unterbewertungen, wenn die Erträge auf der Neubewertung von Vermögensgegenständen und Schulden beruhen, die spätestens am 1. Juli 1990 Betriebsvermögen gewesen sind oder auf das Unternehmen mit Wirkung vom 1. Juli 1990 übertragen worden sind, oder auf dem Erlaß von Schulden beruhen.

(2) Die aus der Neufestsetzung sich ergebenden zahlenmäßigen Veränderungen im Vermögen der in § 1 bezeichneten Gesellschaften und deren Gesellschafter und im Vermögen der in § 1 bezeichneten Genossenschaften und deren Genossen unterliegen nicht den Steuern vom Kapitalverkehr.

§ 52 Steuerliche Ausgangswerte in anderen Fällen

(1) Bei Steuerpflichtigen, die ihren Gewinn nach § 4 Abs. 3 des Einkommensteuergesetzes ermitteln, gelt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der Wirtschaftsgüter, die spätestens am 1. Juli 1990 Anlagevermögen gewesen sind oder auf den Steuerpflichtigen mit Wirkung vom 1. Juli 1990 übertragen worden sind, die Werte, die sich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 7 bis 11 und 18 ergeben. Wirtschaftsgüter nach Satz 1 sind unter Angabe ihres Werts zum 1. Juli 1990 in ein besonderes Verzeichnis (Anlageverzeichnis) aufzunehmen. Ergibt sich bis zum 31. Dezember 1994 einschließlich, daß sie zum 1. Juli 1990 nicht angesetzt werden durften oder zu Unrecht nicht oder wesentlich zu hoch oder zu niedrig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das Anlageverzeichnis insoweit zu berichtigen; sind bereits Steuerbescheide erlassen worden, so sind sie zu ändern, soweit die Berichtigung zu einem geänderten Gewinn oder Verlust führt.

(2) Absatz 1 Satz 1 und 3 ist auf Steuerpflichtige mit Einkünften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Kapitalvermögen, Vermietung und Verpachtung oder mit anderen Einkünften nach §§ 17 und 22 des Einkommensteuer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Rückübertragungen nach dem Vermögensgesetz sind keine Anschaffungen. In diesen Fällen gelt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die Werte, die sich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Absatzes 1 Satz 1 und 3 ergeben.

§ 53 Wirtschaftsjahre 1990 und steuerliche Schlußbilanz

Bei Steuerpflichtigen mit Einkünften nach § 2 Abs. 3 Nr. 1 bis 3 des Einkommensteuergesetzes sind Wirtschaftsjahre im Kalenderjahr 1990 die Zeiträume vom 1. Januar bis zum 30. Juni und vom 1. Juli bis zum 31. Dezember. In der steuerlichen Schlußbilanz zum 31. Dezember können Rückstellungen nach § 5 Abs. 4 des Einkommensteuergesetzes nicht und Pensionsrückstellungen nu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54 gebildet werden.

§ 54 Pensionsrückstellungen

(1) Für eine Pensionsverpflichtung darf eine Rückstellung (Pensionsrückstellung) nur gebildet werden, wenn

1. der Pensionsberechtigte einen Rechtsanspruch auf einmalige oder laufende Pensionsleistungen hat,
2. die Pensionszusage keinen Vorbehalt enthält, daß die Pensionsanwartschaft oder die Pensionsleistung gemindert oder entzogen werden kann, oder ein solcher Vorbehalt sich nur auf Tatbestände erstreckt, bei deren Vorliegen nach allgemeinen Rechtsgrundsätzen unter Beachtung billigen Ermessens eine Minderung oder ein Entzug der Pensionsanwartschaft oder der Pensionsleistung zulässig ist, und
3. die Pensionszusage schriftlich erteilt ist.

(2)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erstmals gebildet werden

1. vor Eintritt des Versorgungsfalls für das Wirtschaftsjahr, in dem die Pensionszusage erteilt wird, frühestens jedoch für das Wirtschaftsjahr, bis zu dessen Mitte der Pensionsberechtigte das 30. Lebensjahr vollendet,
2. nach Eintritt des Versorgungsfalls für das Wirtschaftsjahr, in dem der Versorgungsfall eintritt.

(3)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höchstens mit dem Teilwert der Pensionsverpflichtung angesetzt werden. Als Teilwert einer Pensionsverpflichtung gilt

1. vor Beendigung des Dienstverhältnisses des Pensionsberechtigten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a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abzüglich des sich auf denselben Zeitpunkt ergebenden Barwerts betragsmäßig gleichbleibender Jahresbeträge. Die Jahresbeträge sind so zu bemessen, daß am Beginn des Wirtschaftsjahrs, in dem das Dienstverhältnis begonnen hat, ihr Barwert gleich dem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ist; die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sind dabei mit dem Betrag anzusetzen, der sich nach den Verhältnissen am Bilanzstichtag ergibt. Es sind die Jahresbeträge zugrunde

zu legen, die vom Beginn des Wirtschaftsjahrs, in dem das Dienstverhältnis begonnen hat, bis zu dem in der Pensionszusage vorgesehenen Zeitpunkt des Eintritts des Versorgungsfalls rechnermäßig aufzubringen sind. Erhöhungen oder Verminderungen der Pensionsleistungen nach de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die hinsichtlich des Zeitpunkts ihres Wirksamwerdens oder ihres Umfangs ungewiß sind, sind bei der Berechnung des Barwerts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und der Jahresbeträge erst zu berücksichtigen, wenn sie eingetreten sind. Wird die Pensionszusage erst nach dem Beginn des Dienstverhältnisses erteilt, so ist die Zwischenzeit für die Berechnung der Jahresbeträge nur insoweit als Wartezeit zu behandeln, als sie in der Pensionszusage als solche bestimmt ist. Hat das Dienstverhältnis schon vor der Vollendung des 30. Lebensjahrs des Pensionsberechtigten bestanden, so gilt es als zu Beginn des Wirtschaftsjahrs begonnen, bis zu dessen Mitte der Pensionsberechtigte das 30. Lebensjahr vollendet;

2. nach Beendigung des Dienstverhältnisses des Pensionsberechtigten unter Aufrechterhaltung seiner Pensionsanwartschaft oder nach Eintritt des Versorgungsfalls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a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Nummer 1 Satz 4 gilt sinngemäß.

Bei der Berechnung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tung sind ein Rechnungszinsfuß von sechs vom Hundert und die anerkannten Regeln der Versicherungsmathematik anzuwenden.

(4)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höchstens um den Unterschied zwischen dem Teilwert der Pensionsverpflichtung am Schluß des am 31. Dezember 1990 endenden Wirtschaftsjahrs (Erstjahr) und dem Beginn des Wirtschaftsjahrs erhöht werden. Erhöht sich am Schluß des Erstjahrs gegenüber dem Beginn dieses Wirtschaftsjahrs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um mehr als 25 vom Hundert, so kann die für das Erstjahr zulässige Erhöhung der Pensionsrückstellung auf dieses Wirtschafts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Darf am Schluß des Erstjahrs mit der Bildung einer Pensionsrückstellung begonnen werden, darf die Rückstellung bis zur Höhe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tung am Schluß dieses Wirtschaftsjahrs gebildet werden. Diese Rückstellung kann auf das Erst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Endet das Dienstverhältnis des Pensionsberechtigten unter Aufrechterhaltung seiner Pensionsanwartschaft im Erstjahr oder tritt der Versorgungsfall in diesem Wirtschaftsjahr ein, darf die Pensionsrückstellung stets bis zur Höhe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tung gebildet werden. Die für dieses Wirtschaftsjahr zulässige Erhöhung der Pensionsrückstellung kann auf das Erst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5) Die Absätze 3 und 4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wenn der Pensionsberechtigte zu dem Pensionsverpflichteten in einem anderen Rechtsverhältnis als einem Dienstverhältnis steht.

§ 55 Einlagen

Werden einem Betrieb innerhalb von drei Jahren nach dem 30. Juni 1990 Wirtschaftsgüter als Einlage zugeführt, die vor dem 1. Juli 1990 angeschafft oder hergestellt worden sind, so gilt der Betrag, den der Steuerpflichtige in einer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hätte ansetzen könn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 56 Gebühren

(1) Gerichtsgebühren und notarielle Beurkundungsgebühren, die anlässlich de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d der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nach diesem Gesetz entstehen, ermäßigen sich um fünfzig vom Hundert. Übersteigt die nach Satz 1 zu berechnende Gebühr für die Beurkundung von Versammlungsbeschlüssen zweitausend Deutsche Mark, so ermäßigt sich der zweitausend Deutsche Mark übersteigende Betrag um weitere fünfundzwanzig vom Hundert. Fließen die Gebühren dem Notar selbst zu, ermäßigen sich die Gebühren entsprechend § 144 Abs. 1 des Gesetzes über die Kosten i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Kosten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361-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5 des Gesetzes vom 5. April 1990 (BGBl. I S. 701).

(2) Die Ermäßigung gilt auch für die Gebühren, die bei einer Umwandlung von Gesellschaften entstehen, sofern die Umwandlung nicht später als die Neufestsetzung beschlossen wird und nach der Eröffnungsbilanz das Nennkapital ei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icht erreicht oder das übertragene Eigenkapital der Aktiengesellschaft oder der 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ei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oder das übertragene Eigenkapital der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fünfzigtausend Deutsche Mark nicht erreicht. Die Ermäßigung erstreckt sich nicht auf die Gebühren, die anlässlich des Ausgleichs eines Kapitalentwertungskontos entstehen.

(3) Wird ein Beschluß, für dessen Beurkundung die Gebühren nach Absatz 1 zu ermäßigen sind, zugleich mit anderen nicht unter Absatz 1 fallenden Beschlüssen beurkundet, angemeldet oder eingetragen und ist dafür eine einheitliche Gebühr zu erheben, so ermäßigt sich nur der Teilbetrag der Gesamtgebühr, der die Gebühr, die für das nicht unter Absatz 1 fallende Geschäft bei gesonderter Vornahme zu erheben wäre, übersteigt.

(4) Die Ermäßigung erstreckt sich nicht auf die Zusatzgebühr für Beurkundungen außerhalb der Gerichtsstelle und für fremdsprachliche Erklärungen; die Gebühr für die Beurkundung außerhalb der Gerichtsstelle darf jedoch den Betrag der für das Geschäft selbst zu erhebenden (ermäßigten) Gebühr nicht übersteigen.

(5) Die Bestimmungen über die Mindestgebühr bleiben unberührt.

Abschnitt 9

Verfahren der Kapitalneufestsetzung. Sonstige Vorschriften

§ 56a Einfache Mehrheit

(1) Für den Beschluß der Hauptversammlung oder der Gesellschafterversamml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über die Neufestsetz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und die Einziehung von Anteilen genügt die einfache Mehrheit des bei der Beschlußfassung vertretenen gezeichneten Kapitals ohne Rücksicht auf die Stimmzahl. Eines Sonderbeschlusses der einzelnen Gattungen von Anteilen bedarf es nicht. Dies gilt auch dann, wenn die Satzung oder der Gesellschaftsvertrag etwas anderes bestimmen. Für eine zugleich mit der Neufestsetzung beschlossene Erhöh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gelten die für die Rechtsform maßgeblichen Vorschriften über die Kapitalerhöhung nur, wenn diese nicht aus vorhandenem Eigenkapital erfolgt.

(2) Für den Beschluß der Mitgliederversammlung von Genossenschaften, durch den die Geschäftsguthaben, die Geschäftsanteile und die Haftsummen neu festgesetzt werden, genügt die einfache Mehrheit der abgegebenen Stimmen, auch wenn gesetzliche Vorschriften oder das Statut etwas anderes bestimmen. Wird mit der Neufestsetzung gleichzeitig eine Erhöhung der neu festgesetzten Geschäftsanteile beschlossen, so sind die Vorschriften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nur anzuwenden, wenn die Erhöhung nicht aus vorhandenem Eigenkapital erfolgt.

§ 56b Inhalt der Anmeldung. Prüfung durch das Gericht

(1) Bei der Anmeldung des Beschlusses über die Neufestsetzung sind die festgestellte Eröffnungsbilanz und der Bericht des Vorstands oder der Geschäftsführer zum Handelsregister des Sitzes der Kapitalgesellschaft einzureichen; dies gilt bei Genossenschaften entsprechend für die Anmeldung zum Genossenschaftsregister. Bei der Anmeldung haben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zu erklären, daß die Beschlüsse über die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d die Neufestsetzung nicht angefochten sind oder die Anfechtung rechtskräftig zurückgewiesen ist.

(2) Die Geschäftsführer vo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haben eine von ihnen unterschriebene Liste der Gesellschafter beizufügen, aus der Name, Vorname, Stand und Wohnort der Gesellschafter sowie ihre Stammeinlagen und die darauf noch zu leistenden Einzahlungen hervorgehen.

(3) Das Registergericht kann die Eintragung der Neufestsetzung auch ablehnen, wenn die Prüfer den Bestätigungsvermerk für die Eröffnungsbilanz versagt haben.

(4) Ist die Eröffnungsbilanz nicht geprüft worden, so kann das Gericht die Prüfung anordnen und einen Prüfer bestellen, wenn Anhaltspunkte dafür bestehen, daß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die gesetzlichen Vorschriften nicht beachtet wurden oder Unredlichkeiten vorgekommen sind. Vor der Anordnung sind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zu hören.

(5)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haben auch eine vorläufige Neufestsetzung nach § 28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oder das Genossenschaftsregister anzumelden. Die Durchführung des Ausgleichs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durch Tilgung oder durch andere Maßnahmen ist gleichfalls zur Eintragung anzumelden. In der Anmeldung ist zu erklären, in welcher Weise der Ausgleich durchgeführt ist.

(6) Die Kapitalneufestsetzung ist bewirkt, sobald sie in das Handelsregister oder Genossenschaftsregister des Sitzes des Unternehmens eingetragen ist.

§ 56c Umtausch und Zusammenlegung von Anteilen

(1) Die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Aktien sind in Aktien, die auf Deutsche Mark lauten, umzutauschen oder abzustempeln. Müssen Aktien zusammengelegt werden, so ist auf den Umtausch und die Abstempelung § 226 des Aktien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2) Bevor die Neufestsetzung in das Handelsregister oder in das Genossenschaftsregister eingetragen ist, dürfen die sich aus ihr ergebenden neuen Geschäftsanteile nicht gebildet werden. Werden im Falle der Verminderung der Zahl der Geschäftsanteile der Gesellschaft oder Genossenschaft Anteile nicht zur Verwertung für Rechnung der Beteiligten zur Verfügung gestellt, so sind die anstelle der bisherigen Geschäftsanteile zu bildenden neuen Geschäftsanteile für Rechnung der Beteiligten durch die Gesellschaft oder Genossenschaft im Wege der öffentlichen Versteigerung zu verkaufen. Der Erlös ist den Beteiligten nach Abzug der Kosten auszuzahlen oder, wenn ein Recht zur Hinterlegung besteht, zu hinterlegen.

§ 56d Überschuldung oder Verlust des halben gezeichneten Kapitals

(1)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sind bis zur Beschlußfassung über die Kapitalneufestsetzung durch das dafür zuständige Organ nicht verpflichtet, wegen einer bei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sich ergebenden Überschuldung nach § 92 Abs. 2 Satz 2 des Aktiengesetzes, § 64 Abs. 1 Satz 2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oder § 99 Abs. 1 Satz 2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die Eröffnung des Gesamtvollstreckungsverfahrens zu beantragen; dies gilt auch für Abwickler oder Liquidatoren. Während dieser Zeit sind der Vorstand und die Geschäftsführer auch von der Pflicht zur Einberufung einer Versammlung nach § 92 Abs. 1 des Aktiengesetzes oder § 49 Abs. 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wegen eines Verlustes des gezeichneten Kapitals, der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befreit.

(2) Ist eine vorläufige Neufestsetzung im Handelsregister eingetragen, so sind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wegen eines Verlustes des gezeichneten Kapitals, der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für die Zeit, die zum Ausgleich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vorgesehen ist, von der Pflicht zur Einberufung einer Versammlung d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befreit.

(3) Absatz 1 gilt auch für den Fall, daß bei einer Kapitalgesellschaft, deren Anteile der Treuhandanstalt gehören, die Überschuldung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ber vor der Beschlußfassung über die Kapitalneufestsetzung oder danach auf Grund einer Berichtigung nach § 36 eintritt. Leitet die Treuhandanstalt die Liquidation einer Kapitalgesellschaft vor der Beschlußfassung über die Kapitalneufestsetzung ein, so ist Absatz 1 in Verbindung mit Satz 1 bis zum Abschluß der Liquidation anzuwenden.

§ 56e Kredite an Treuhandunternehmen

(1) Die §§ 32a und 32b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sind nicht anzuwenden auf Kredite gemäß Artikel 25 Abs. 7 des Einigungsvertrages und auf Kredite, welche die Treuhandanstalt der Gesellschaft gewährt oder für die sie eine Sicherung bestellt oder sich verbürgt hat. Dies gilt nicht für Kredite, welche die Treuhandanstalt der Gesellschaft nach einer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gewährt oder für die sie nach diesem Zeitpunkt eine Sicherung bestellt oder sich verbürgt.

(2) Absatz 1 ist auch anzuwenden, soweit ein Rechtsnachfolger nach § 23a Abs. 3 des Treuhandgesetzes in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Treuhandanstalt in bezug auf den Kredit eintritt.

§ 57 Auflösung

(1)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welche die Neufestsetzung ihrer Kapitalverhältnisse nach diesem Gesetz nicht bis zum 31. Dezember 1994 ordnungsgemäß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angemeldet haben, sind mit dem Ablauf dieses Tages aufgelöst. Ist der Beschluß über die Neufestsetzung vor dem 31. Dezember 1994 angefochten worden, so tritt an die Stelle des 31. Dezember 1994 der sechs Monate nach dem Tag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liegende Tag.

(2)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eren Grundkapital nach der Neufestsetzung auf weniger als die nach der Rechtsform zulässigen Mindestbeträge lautet und die eine Erhöhung des Nennkapitals beschlossen haben, sind außerdem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2 aufgelöst, wenn die Erhöhung des Nennkapitals auf den zulässigen Mindestnennbetrag bis zu diesem Zeitpunkt nicht ordnungsgemäß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angemeldet worden ist.

(3)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ie von der Befugnis, ein Kapitalentwertungskonto zu bilden, Gebrauch gemacht haben, sind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7 aufgelöst, wenn die Durchführung des Ausgleichs nicht bis zu diesem Zeitpunkt in das Handelsregister eingetragen worden ist.

(4) Absatz 1 Satz 1 ist entsprechend auf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anzuwenden, wenn die notwendigen Änderungen des Statuts nicht bis zum 31. Dezember 1992 ordnungsgemäß zur Eintragung in das Genossenschaftsregister angemeldet worden sind. Auf die Beschlüsse der Mitgliederversammlung ist das am 1. Juli 1990 geltende Statut der Genossenschaft mit den danach beschlossenen Änderungen anzuwenden.

§ 58 Geschäftsjahr

(1) Die Unternehmen haben ihr Geschäftsjahr neu festzusetzen. Das erste Geschäftsjahr kann abweichend von § 240 Abs. 2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bis zu achtzehn Monate, bei Geldinstituten und Versicherungsunternehmen bis zu zwölf Monate umfassen. Der Beschluß über die Verlängerung des Geschäftsjahres kann nur bis zum Ablauf des 30. Juni 1991 gefaßt werden. Einer Änderung der Satzung oder des Gesellschaftsvertrages bedarf es nicht, wenn das Geschäftsjahr lediglich aufgrund dieser Vorschrift verlängert wird.

(2) Unternehmen, die von Absatz 1 Gebrauch machen, müssen für den 31. Dezember 1990 einen Jahresabschluß nach den für sie maßgeblichen Vorschriften des Handelsrechts aufstellen. Eines Anhangs bedarf es nicht. Der Jahresabschluß braucht weder geprüft noch offengelegt zu werden.

Abschnitt 10 Schlußvorschriften

§ 59 Ermächtigung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und de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Vorschriften zur Ausführung dieses Gesetzes über Form und Inhalt der nach den §§ 1, 21, 39 und 45 aufzustellenden Unterlagen, die Kapitalausstattung der Unternehmen sowie über die Durchführung der Prüfung, die Feststellung und Offenlegung dieser Unterlagen und des dabei einzuhaltenden Verfahrens zu erlassen, soweit diese Vorschriften erforderlich sind, um die Durchführung der Währungsumstellung im Sinne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und der Zielsetzung dieses Gesetzes zu gewährleisten.

§ 60 Anwendung

Dieses Gesetz ist mit Wirkung vom 1. Juli 1990 im gesamten Bundesgebiet anzuwenden, die Bestimmungen des Abschnitts 7 jedoch erst vom 29. März 1991 an. Für das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 Gebiet sind die Bestimmungen des Abschnitts 7 mit Ausnahme des § 48 Abs. 1 Nr. 4 mit Wirkung vom 29. September 1990 anzuwenden.

문서 번호 51

화폐통합과정에서 화폐전환 정산의 확인과 차액보존 청구권의 획득 절차에 관한 규정

1990 년 10 월 29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신용관리국, 독일 연방은행,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내용:

이 문서는 화폐통합과정에서 금융과 대외무역을 담당하였던 기관의 재정결산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먼저 두 개의 개념을 정의한다. 1990 년 7 월 1 일 이전에 동독에서 은행업무를 담당했던 기업은 금융기관이라 부르고 1990 년 7 월 이전에 동독 정부의 지시로 동독 외부에서 다른 국가 또는 외국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졌거나 대외무역을 담당했던 기업은 대외무역업체라고 부른다. 거기에는 대외무역업체의 사업 전체 또는 정리를 목적으로 기업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는 연방금융감독원과 도이치방크에 1991 년 3 월 15 일까지 화폐통합 이후 재정결산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연방금융감독원에서 화폐전환과정에서 대차대조법에 의거하여 이들 금융기관과 기업의 보유재산의 가치와 채무가 정확하게 전환되었는지 검토하고 결산서를 확인해 준다. 이 절차는 회계사에 의한 검토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의 자산가치와 채무는 1990 년 7 월 1 일자 재정결산을 근거로 산정된다. 연방금융감독원은 이들에게 화폐전환과 관련한 모든 업무자료를 비롯하여 자산과 채무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규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0, Nr. 59, S. 2394-2397, Ausgabetag 03.11.1990

**Verordnung
über die Bestätigung der Umstellungsrechnung
und das Verfahren der Zuteilung und des Erwerbs
von Ausgleichsforderungen
(BUZAV)**

Vom 29. Oktober 1990

Auf Grund des Artikels 8 § 5 der Anlage I des Vertrages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GBl. 1990 II S. 537) sowie des Artikels 28 des Gesetzes zu diesem Vertrag vom 25. Juni 1990 (BGBl. 1990 II S. 518) in Verbindung mit § 1 der Verordnung zur Übertragung der Befugnis zum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 auf das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nach dem Gesetz zum Vertrag vom 18. Mai 1990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4. September 1990 (BGBl. I S. 1995) verordnet das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nach Anhörung der Deutschen Bundesbank und mit Zustimmung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 1

Begriffsbestimmungen

Im Sinne dieser Verordnung sind

1. Geldinstitute Unternehmen, die vor dem 1.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fugt Bankgeschäfte nach § 1 Abs.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1. Juli 1985 (BGBl. I S. 1472) betrieben haben; die Befugnis kann auf Gesetz, Verordnung, behördlicher Anordnung oder behördlicher Erlaubnis beruhen,
2. Außenhandelsbetriebe Unternehmen, die vor dem 1.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Auftrag staatlicher Stellen im Rahmen des Außenhandels- und Valutamonomopols Geschäfte mit Unternehmen oder Ländern außerhalb des Währungsgebietes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ieben haben. Dazu rechnen auch Unternehmen, die den Geschäftsbetrieb von Außenhandelsbetrieben ganz oder teilweise zum Zwecke der Abwicklung übernommen haben, hinsichtlich des abzuwickelnden Vermögens.

§ 2

Einreichung von Unterlagen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haben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Bundesaufsichtsamt) und der Deutschen Bundesbank bis zum 15. März 1991

1. die nach der Anordnung über den Abschluß der Buchführung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m 30. Juni 1990 vom 27. Juni 1990 (GBl. der DDR Teil I Nr. 40 S. 593) aufgestellte, geprüfte und

bestätigte Schlußbilanz sowie Gewinn- und Verlustrechnung zum 30. Juni 1990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 die nach dem D-Markbilanzgesetz vom 23. September 1990 (BGBl. 1990 II S. 885, 1169) aufgestellte, geprüfte, festgestellte und mit einem Bestätigungsvermerk versehen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für den 1. Juli 1990 nebst Anhang und vergleichender Darstellung,
3. eine Versicherung der Geschäftsleiter, daß sie dem Prüfer alle Unterlagen vorgelegt haben, die mit der Währungsumstellung in Zusammenhang stehen oder stehen können, und ihn über alle Geschäftsvorgänge unterrichtet haben, die mit einer eventuellen Umgestaltung der Geschäftstätigkeit seit dem 1. März 1990 zusammenhängen, sowie
4. den Bericht über die Prüfung der Eröffnungsbilanz einzureichen. Geldinstitute haben ferner den zum Stichtag 1. Juli 1990 ausgefüllten Vordruck 10410/07.90 der Deutschen Bundesbank (Berechnung der Kennziffern der Grundsätze gemäß §§ 10 und 1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 Grundsatz I –) (Anlage) einzureichen.

(2) Haben Außenhandelsbetriebe oder Geldinstitute nach §§ 21, 22 des D-Markbilanzgesetzes eine Konzernöffnungsbilanz und einen Konzernanhang aufzustellen, so sind diese Unterlagen sowie der Bericht über die Prüfung der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s Konzernanhangs bis zum 15. März 1991 dem Bundesaufsichtsamt und der Deutschen Bundesbank einzureichen.

§ 3

Bestätigung der Umstellungsrechnung

Das Bundesaufsichtsamt prüft anhand der in § 2 genannten Unterlagen, ob die Vermögenswerte und Verbindlichkeit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dem D-Markbilanzgesetz umgestellt worden sind und bestätigt die Umstellungsrechnung. Es ist nicht an den Bestätigungsvermerk des Prüfers gebunden.

§ 4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de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1) Das Bundesaufsichtsamt teilt Geldinstituten Forderungen gege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ls Ausgleichsforderungen so zu, daß die Vermögenswerte ausreichen, um die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lungen zu decken und ferner ein Eigenkapital in der Höhe auszuwei-

sen, daß es mindestens 4 vom Hundert der Bilanzsumme und die Auslastung des nach § 10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vom Bundesaufsichtsamt erlassenen Grundsatzes I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9. Dezember 1985 (BAnz. S. 15302) höchstens das 13fache beträgt.

(2) Das Bundesaufsichtsamt teilt Außenhandelsbetriebe Forderungen gege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ls Ausgleichsforderungen so zu, daß die Vermögenswerte ausreichen, um die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lungen zu decken.

(3) Die Vermögenswerte und Verbindlichkeiten de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ergeben sich aus deren geprüften und festgestellten Eröffnungsbilanzen zum 1. Juli 1990.

(4) Die Ausgleichsforderungen werden auf volle einhundert Deutsche Mark abgerundet zugeteilt.

§ 5

Zuteilung von Forderungen des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1) Das Bundesaufsichtsamt teilt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Forderungen gegen Geldinstitute zu, soweit deren Vermögenswerte die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lungen sowie das Eigenkapital gemäß § 4 Abs. 1 überschreiten.

(2) Das Bundesaufsichtsamt teilt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Forderungen gegen Außenhandelsbetriebe zu, soweit deren Vermögenswerte die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lungen überschreiten.

(3) Hat das Bundesaufsichtsamt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eine Forderung gegen ein Geldinstitut oder einen Außenhandelsbetrieb zugeteilt, teilt es dem betroffenen Unternehmen mit, daß dieses eine entsprechende Ausgleichsverbindlichkeit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hat.

(4) Das Bundesaufsichtsamt teilt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die Höhe der gegen ihn gerichteten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sowie seiner Forderungen nach Absatz 1 und 2 mit. Soweit die gegen ihn gerichteten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insgesamt höher sind als seine Forderungen nach Absatz 1 und 2, teilt das Bundesaufsichtsamt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eine Forderung gegen das Sondervermögen des Bundes „Kreditabwicklungsfonds“ zu. Der fortgeschriebene Saldo der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sowie der Forderungen nach Absatz 1 und 2 wird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einmal monatlich bestätigt. Die Bestätigung gilt als Zuteilung.

(5) § 4 Abs. 3 und 4 gilt entsprechend.

§ 6

Verzinsung und Tilgung

(1) Di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und die Forderungen des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nach § 5 Abs. 1, 2 und 4 werden unbeschadet des Zeitpunktes ihrer Zuteilung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vierteljährlich nachträglich verzinst. Die Zinsen sind auf den Teil des Kapitalbetrages zu entrichten, der noch nicht getilgt wurde. Der Zinssatz entspricht dem Angebotssatz für Einlagen in Deutscher Mark unter Banken für einen der Zinsperiode entsprechenden Zeitraum in Frankfurt am Main (3-Monats-FIBOR). Für die jeweilige Zinsperiode ist der 3-Monats-FIBOR-Satz vom zweiten Geschäftstag vor dem Beginn der Zinsperiode maßgebend (entsprechend § 2 Abs. 3 der Bedingungen für die Anleih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1990 – Wertpapier-Kennnummer 113 478 – ohne den darin vorgesehenen Abschlag).

(2) Di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und die Forderungen des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nach § 5 Abs. 1, 2 und 4 werd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5 jährlich nachträglich in Höhe von 2,5 vom Hundert des Nennwertes getilgt, erstmals am 1. Juli 1996.

§ 7

Vorläufigkeit der Zuteilung

(1) All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und Forderungen nach § 5 Abs. 1, 2 und 4 werden bis zum Ablauf des Geschäftsjahres, das vor dem Jahr 1995 endet, vorläufig zugeteilt. Vorläufige Zuteilungen nach Satz 1 werden vor der endgültigen Zuteilung geändert, es sei denn, daß die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eine Änderung der Zuteilung um einen Betrag von weniger als zehntausend Deutsche Mark zur Folge hätte.

(2)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sind verpflichtet, das Bundesaufsichtsamt über jede Berichtigung eines Wertansatzes nach § 36 des D-Markbilanzgesetzes zu unterrichten. Sie haben hierzu einen mit dem Bestätigungsvermerk des Abschlußprüfers versehenen Auszug aus dem betreffenden Prüfungsbericht auch dann einzureichen, wenn das Bundesaufsichtsamt den vollständigen Prüfungsbericht nach anderen Rechtsvorschriften erhält.

(3) Überträgt ein Geldinstitut oder Außenhandelsbetrieb die Gesamtheit seiner Vermögenswerte und Verbindlichkeiten, die der Eröffnungsbilanz zugrunde liegen, einem anderen Unternehmen, so hat das Geldinstitut oder der Außenhandelsbetrieb dies unverzüglich dem Bundesaufsichtsamt anzuzeigen. Das übernehmende Unternehmen hat die übertragenen Vermögenswerte und Verbindlichkeiten bis zur Feststellung des Jahresabschlusses für das im Jahre 1994 endende Geschäftsjahr in seinen Büchern gesondert zu erfassen und fortzuführen. Absatz 2 gilt für das übernehmende Unternehmen entsprechend.

(4) Ergibt sich bei der endgültigen Zuteilung, daß vorläufig zugeteilt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und Forderungen nach § 5 Abs. 1, 2 und 4 auf Grund der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und einer Änderung der Eröffnungsbilanzen zu hoch oder zu niedrig bemessen waren, sind zuviel gezahlte Zinsen zurückzuzahlen, nicht gezahlte Zinsen nachzuzahlen, und zwar jeweils innerhalb von sechs Wochen nach der endgültigen Zuteilung. Satz 1 gilt entsprechend bei einer Änderung vorläufiger Zuteilungen nach Absatz 1 Satz 2.

§ 8

**Abtretung, Verpfändung und Umwand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1) Zugeteilt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können abgetreten, beliehen und verpfändet werden.

(2) Auf Antrag des Gläubigers sind endgültig zugeteilt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vo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umzuwandeln; vorläufig zugeteilte Ausgleichsforderungen nach § 4 Abs. 1 und 2 können bis zu 75 vom Hundert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umgewandelt werden. Der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hat die Summe der Nennbeträge der umgewandelten Ausgleichsforderungen in einer Globalurkunde zu verbriefen, die beim Deutschen Kassenverein zugunsten der Berechtigten hinterlegt wird. Die Ausgabe von Einzelurkunden ist ausgeschlossen. Der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macht die Emissionsbedingungen für die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im Bundesanzeiger bekannt. Er beantragt die Einführung der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zum amtlichen Börsenhandel.

(3) Sind vorläufig zugeteilte Ausgleichsforderungen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umgewandelt worden und ergibt sich später auf Grund der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und einer Änderung der Eröffnungsbilanz, daß sie zu hoch bemessen waren, so sind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nicht umgewandelte Ausgleichsforderungen oder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in entsprechendem Umfang zurückzugeben oder es ist der

Betrag der Ausgleichsforderungen, der zu hoch bemessen war, in Geld zu erstatten.

§ 9

**Prüfungen und Eingriffsbefugnisse
des Bundesaufsichtsamtes**

(1) Das Bundesaufsichtsamt kann Auskünfte über alle mit der Währungsumstellung und der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zusammenhängenden Geschäftsangelegenheiten sowie die Vorlegung der Bücher und Schriften verlangen, auch soweit sie Vorgänge vor dem 1. Juli 1990 betreffen. Es kann insbesondere prüfen, ob Ansprüche gegen frühere Anteilseigner vollständig erfaßt sind. Es kann sich bei der Durchführung seiner Aufgaben anderer Personen und Einrichtungen bedienen.

(2) Werden die in § 2 genannten Unterlagen nicht fristgerecht, der in § 7 Abs. 2 genannte Prüfungsauszug nicht unverzüglich eingereicht, so kann das Bundesaufsichtsamt die Vorlage dieser Unterlagen durch Verfügung verlangen und mit Zwangsmitteln nach den Bestimmungen des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es durchsetzen.

(3) Das Bundesaufsichtsamt entscheidet über die Zuteilung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4 Abs. 1 und 2 sowie einer Forderung nach § 5 Abs. 1, 2 und 4 auch ohne Antrag.

§ 10

Inkrafttreten

Diese Verordnung tritt am Tage nach der Verkündung in Kraft.

Berlin, den 29. Oktober 1990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Kuntze

Berechnung der Kennziffern der Grundsätze gemäß §§ 10 und 1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 Bekanntmachung Nr. 1/69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Kreditwesen, zuletzt geändert mit Bekanntmachung vom 23. September 1988 -

Nur für Vermerk der LZB
Kontrolliert

Banknummer Prof. / f.

Stand Ende _____

Name _____ Ort _____

GB1

Grundsatz I

Komponenten	Vordruck-Zeile/Spalte	- Beträge in Tsd DM -			
		1	2	3	4
Forderungen an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sowie an öffentliche Haushalte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01 B1 100/4 Bspk.: B2 100/3 B1 400/4 - X1 428/4				
abzüglich Bundesbahn und Bundespost bzw. Reichsbahn und Post	02 Bspk.: B2 400/3 B1 111/4 03 Bspk.: B2 111/3	/			
Eigen- und Regiebetriebe der öffentlichen Haushalte	04 B1 112/4 Bspk.: B2 112/3	/			
Wechselkredite an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sowie an öffentliche Haushalte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05 B2 100/1+2 06 B2 400/1+2 - X1 429/1+2				
abzüglich Bundesbahn und Bundespost bzw. Reichsbahn und Post	07 B2 111/1+2	/			
Eigen- und Regiebetriebe der öffentlichen Haushalte	08 B2 112/1+2	/			
Weiterleitungskredite des die Mittel bereitstellenden Instituts, soweit diesem nur der Endkreditnehmer haftet	09 SA1 062				
abzüglich nachstehender Kredite, soweit in den Positionen B1 100/4, B1 400/4, B2 100/1+2, B2 400/1+2 (Bspk.: B2 100/3, B2 400/3) enthalten	10 SA1 050			/	
Weiterleitungskredite, soweit sie nicht mit eigenem Risiko des durchleitenden Instituts behaftet sind	11 SA1 010			/	
Forderungen und Wechselkredite an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im Geltungsbereich des KWG und an die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2 SA1 120			davon 30 % /	
Bausparanlagen aus Zuteilungen und Darlehen zur Vor- und Zwischenfinanzierung von Leistungen der Bausparkassen auf Bausparverträge von privaten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im Geltungsbereich des KWG sowie von Nichtbanken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KWG, soweit sie nicht vo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im Geltungsbereich des KWG verbürgt oder von diesen in anderer Weise gesichert sind	13 SA1 021				
Forderungen an private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im Geltungsbereich des KWG sowie an Nichtbanken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KWG, soweit sie vo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im Geltungsbereich des KWG, von den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oder der Europäischen Investitionsbank verbürgt oder von diesen in anderer Weise abgesichert sind	14 SA1 022				
Kredite an private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im Geltungsbereich des KWG sowie an Nichtbanken (ohne Europäische Gemeinschaften)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KWG gemäß Absatz 5 Ziffer 2 und 3 des Grundsatzes I	15 SA1 023 A1 120/6+7+8 - X1 128/6+7+8 Bspk.: A1 120/8			davon 50 % /	
Darlehen an private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im Geltungsbereich des KWG sowie an Nichtbanken (ohne Europäische Gemeinschaften)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KWG, die als Deckung für Kommunal- oder Schiffskommunalschuldverschreibungen dienen	16 SA1 080		/		
Forderungen und Wechselkredite an Kreditinstitute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17 SA1 080				
abzüglich Forderungen und Wechselkredite an die Europäische Investitionsbank	18 SA1 030 A1 110/6+7+8 + X1 128/6+7+8 Bspk.: A1 110/8				davon 50 %
Eventualforderungen aus Bürgschaften, Wechsel- und Scheckbürgschaften, Gewährleistungsverträgen (einschließlich Underwriting-Vereinigungen) und aus der Bestellung von Sicherheiten für fremde Verbindlichkeiten an private 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im Geltungsbereich des KWG sowie an Nichtbanken (ohne Europäische Gemeinschaften) und Kreditinstitute (ohne Europäische Investitionsbank)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KWG	19 SA1 080				
Forderungen und Wechselkredite an Kreditinstitu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20 SA1 080	/			
abzüglich Forderungen und Wechselkredite an die Europäische Investitionsbank	21 HV1 069	/			
Forderungen an die Deutsche Bundesbank	22 SA1 060	/			
Kredite, die über andere Kreditinstitute an den Endkreditnehmer geleitet werden	23 Bspk.: A1 113/8	/			
Forderungen an eigene Häuser (gilt nur für Girozentrale/Sparkasse, wenn Meldung einschließlich der rechtlich unselbständigen Bausparkasse erfolgt)	24 Bspk.: A2 113/7	/			
Weiterleitungskredite des die Mittel bereitstellenden Instituts, soweit diesem das durchleitende Institut haftet	25 SA1 061				
Eventualforderungen aus Bürgschaften, Wechsel- und Scheckbürgschaften, Gewährleistungsverträgen (einschließlich Underwriting-Vereinigungen) und aus der Bestellung von Sicherheiten für fremde Verbindlichkeiten an Kreditinstitute im Geltungsbereich des KWG (einschließlich Europ. Investitionsbank)	26 SA1 040				davon 20 %
Gegenstände, über die ein Kreditinstitut als Leasinggeber Leasingverträge abgeschlossen hat	27 SA1 100				
Eventualforderungen aus unbedingten Verpflichtungen der Bausparkassen zur Ablösung fremder Zwischenkredite	28 SA1 130				
Beteiligungen	29 HV1 130				
abzüglich passivierte Wertberichtigungen sowie passivierte Rechnungsabgrenzungsposten zu bereits vereinnahmten, auf künftige Rechnungsperioden entfallenden Erträgen (in Höhe der Anrechnungssätze der zugehörigen Kredite gemäß Grundsatz I)	30 SA1 070			/	
Abzugsposten SA4 700	31 SA4 700			/	
Aktivwerte insgesamt (unbereinigt)	32				A1
Sonderverhältnisse sowie Korrekturposten zu den Aktivwerten des Grundsatzes I	33 SA1 191			+ /	
Aktivwerte insgesamt (bereinigt)	34		zu übertragen auf SA1 195		A2
Haftendes Eigenkapital gemäß §§ 10 bzw. 53 KWG	35 SA3 410				B
Kennziffern des Grundsatzes I¹⁾ (Obergrenze 18-fach) A1 dividiert durch B = unbereinigte Kennziffer	36		Nur bei bestehenden Sonderverhältnissen/Korrekturposten übertragen auf SA3 600	unbereinigt	-fach
A2 dividiert durch B = gültige bzw. bereinigte Kennziffer	37		zu übertragen auf SA3 500	bereinigt	-fach

¹⁾ Mit einer Dezimalstelle

문서 번호 52

독일 경제 1990 년-1991 년. 대규모 국비보조만이 동독지역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것임.

1991 년 1 월 1 일

담당자 / 기관: Günter Pehl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Deutsche Bundesbank, Bundeskabinett, Regierung der DDR, Vorsitzender des Ministerrats der DDR Hans Modrow, Ministerpräsident der DDR Lothar de Maizière, Bundeskanzler Helmut Kohl, F.D.P.

내용:

이 문서는 노동조합의 시각에서 화폐통합문제를 분석한 논문이다. 논문의 핵심적인 질문은 신속한 화폐통합에 대한 대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독의 경제위기가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 년 구동독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지는 반면 서독은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서독 경제의 호황은 1990 년 하반기 이후 심지어 더 촉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독이 누리던 호황은 1980 년대에 전혀 없었던 현상이었다. 1990 년 들어 서독 경제는 생산과 고용 모든 부분에서 확장세를 보였고, 생산시설은 생산력의 90%까지 가동하고 있다. 서독경제가 이렇게 팽창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특히 1990 년 하반기에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수요가 급격하게 팽창하였기 때문이었다. 화폐통합으로 동독지역에도 서독의 마르크가 도입되면서 동독의 민간수요의 대부분이 서독 기업에 의해 충족되게 되었다. 만일 동독으로부터의 수요가 없었더라면 서독경제의 총생산량이 5.5%가 아니라 약 4% 정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서독 국민총생산은 1990 년에 2 조 4400 억 DM 이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2435 억 DM 으로 서독에 비해 약 10 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체제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기업의 생산품의 판로가 급격하게 사라졌고 그리고 인해 생산활동 자체를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동유럽 기업들과의 거래도 점점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동독 산업의 생산 자체가 반으로 줄었다. 많은 기업들이 신탁관리청으로부터 받는 차입금으로 유지되었다.

경제전문자문위원회와 연방은행장과 같은 경제전문가들이 동독경제를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서독 마르크의 도입, 즉 화폐통합은 이런 체제전환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1990 년 2 월 7 일에 동독정부에게 신속한 화폐통합을 제안하였다. 사민당 내에서도

신속한 화폐통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의 경우 신속한 시장경제적 개혁을 원하지 않았지만 로타 드메지에르는 신속한 화폐통합을 선호하였다.

문제는 화폐통합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헬무트 콜 수상은 도이치마르크와 시장경제 그리고 서독의 사회법의 도입을 통해 동독에서 경제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순진한 발상이었다. 자민당이 요구한 대로 동독에서 기업세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다. 연방정부는 독일통일을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적 부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로 인해 서독 재정과 서독 주민들이 재정을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출처: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Jahrgang 52, 1991, Heft 1, S. 26-37,

<http://library.fes.de/gmh/main/pdf-files/gmh/1991/1991-01-a-026.pdf>

Deutsche Wirtschaft 1990/91

Nur mit massiven Staatshilfen kann die Marktwirtschaft in Ostdeutschland Erfolg haben

Günter Pehl, geb. 1923 in Stettin, bis 1988 Chefredakteur der DGB-Funktionärszeitschrift „Die Quelle“, ist seit vielen Jahren wirtschaftspolitischer Mitarbeiter der „Gewerkschaftlichen Monatshefte“.

Nach mehr als 30 Jahren der Berichterstattung über Lage und Entwicklung der bundesrepublikanischen Wirtschaft in dieser Zeitschrift kann nun erstmals über die Wirtschaftsentwicklung im vereinigten Deutschland Bericht erstattet werden. Dabei nimmt die Erörterung der wichtigsten Probleme, die sich aus der Umgestaltung der Kommandowirtschaft in der ehemaligen DDR in eine Marktwirtschaft ergeben, einen breiteren Raum ein. Zu fragen ist etwa, ob es eine wirkliche Alternative zu der von vielen als überstürzt angesehenen Einführung der D-Mark gegeben hat oder ob die Umstellung auf die Marktwirtschaft tatsächlich in dem rasanten Tempo und plötzlich ungeschützt vor der Weltmarktkonkurrenz erfolgen mußte. Geht die Wirtschaftskrise von im Nachkriegsdeutschland einmaligen Ausmaß, in der sich die neuen Bundesländer gegenwärtig befinden, ausschließlich auf den Bankrott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zurück? Wird sie möglicherweise durch die Bonner Wirtschaftspolitik verschärft? Ist die von der konservativen Regierungskoalition beabsichtigte Finanzierung der riesigen Kosten der Einheit vorwiegend durch Kredite und ohne Steuererhöhungen ökonomisch und sozial zu verantworten?

Boom im Westen - schwere Wirtschaftskrise im Osten

Bevor versucht wird, auf diese Fragen Antworten zu geben, zunächst eine Übersicht über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beiden Teilen Deutschlands während des abgelaufenen Jahres 1990. Das herausragende Merkmal war - und ist weiterhin - die gespaltene Konjunktur in Ost und West: eine sich

noch verstärkende Wirtschaftskrise in dem am 3. Oktober 1990 „beigetretenen“ Gebiet und ein wirtschaftlicher Boom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ie gesamtwirtschaftlichen Rechenwerke i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waren auch nicht annähernd vergleichbar. Das Statistische Bundesamt bemüht sich darum, diesen Mißstand zu beseitigen. Bis eine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 für die gesamte Bundesrepublik vorliegt, wird aber noch einige Zeit vergehen. Inzwischen hat das 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in einer empirisch gestützten Modellrechnung versucht, ein Gesamtrechnungssystem aufzubauen, das den Verhältnissen in Westdeutschland nahekommt.“¹ Auf der Grundlage dieser Berechnung haben fünf führende deutsche Wirtschaftsinstitute auch für Ostdeutschland die wichtigsten Daten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 für 1990 und 1991 geschätzt und in ihrem Herbstgutachten veröffentlicht.² Zunächst soll jedoch die Wirtschaftsentwicklung in West und Ost getrennt dargestellt werden, und zwar nicht nur wegen der Unsicherheiten bei den Schätzungen für die ostdeutsche Wirtschaft. Eine Zusammenrechnung der volkswirtschaftlichen Ergebnisse von Ost und West würde gerade das wichtigste Merkmal der gegenwärtigen Wirtschaftsentwicklung im vereinigten Deutschland verschleiern: die gespaltene Konjunktur, einerseits den Boom im Westen und andererseits den katastrophalen Produktions- und Beschäftigungsrückgang im Osten.³

Im Westen: Nachfrage, Produktion und Beschäftigung weiten sich kräftig aus

Während des ganzen Jahres 1990 wa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ine boomartige wirtschaftliche Aufwärtsentwicklung zu beobachten. Sie beschleunigte sich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sogar noch etwas. Während das Bruttosozialprodukt (das Ergebnis der gesamtwirtschaftlichen Leistung) im ersten Halbjahr 1990 *real* (das heißt um Preissteigerungen bereinigt) um 3,9 Prozent zunahm, stieg es im dritten Vierteljahr 1990 um 5,5 Prozent an, und für das vierte Quartal 1990 wird ein Zuwachs von etwa 4,5 Prozent erwartet. Für das ganze Jahr 1990 ergibt sich damit ein reales Wirtschaftswachstum von rund 4,5 Prozent. Ein solches Ergebnis wurde während der gesamten achtziger Jahre nicht erreicht; in den siebziger Jahren gab es einige bessere Ergebnisse (zum Beispiel 1976: 5,6 Prozent). Im Jahr 1989 wuchs das reale Bruttosozialprodukt um 3,9 Prozent.

Nachfrage, Produktion und Beschäftigung haben sich im jetzt abgelaufenen Jahr 1990 kräftig ausgeweitet. Die Produktionskapazitäten sind so stark aus-

1 Wochenbericht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vom 25.10.1990, S. 632

2 Die Lage der Weltwirtschaft und der deutschen Wirtschaft im Herbst 1990, u. a. im Wochenbericht des DIW vom 25.10.1990. Die Daten über die Wirtschaftsentwicklung im Jahre 1990 sind diesem Herbstgutachten entnommen sowie folgenden anderen Veröffentlichungen: Jahresgutachten 1990/91 des Sachverständigenrates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Bundestagsdrucksache 11/8472,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Westdeutschland in den Jahren 1990/91 in WSI-Mitteilungen, H. 11/90, S. 690 ff.,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Deutschland im 3. Quartal 1990 im DIW-Wochenbericht vom 15.11.1990

3 Dieser Bericht wurde am 15. Dezember 1990 abgeschlossen. Die Wirtschaftsdaten für das 4. Quartal 1990 mußten geschätzt werden.

gelastet wie selten zuvor. Im verarbeitenden Gewerbe sind die Kapazitäten zu 90 Prozent ausgelastet, stellte das If o-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Anfang Dezember fest. Die Auftragsbestände hätten bis in die jüngste Zeit zugenommen. Stimmung und Erwartungen waren zum Jahresende bei den Unternehmern größtenteils ausgezeichnet.

Die stärksten Wachstumsimpulse gingen 1990 von den Ausrüstungsinvestitionen und - vor allem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 von der *Nachfrage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aus. Nach der Einführung der D-Mark in der ehemaligen DDR wurde ein großer Teil des Bedarfs der privaten Haushalte, aber auch der Unternehmen, in Westdeutschland gedeckt. Das DIW schätzt, daß etwa 1,5 Prozentpunkte des Sozialproduktwachstums in der „alten“ Bundesrepublik im dritten Vierteljahr 1990 allein diesen Kaufentscheidungen zuzurechnen ist. Das reale Sozialprodukt wäre also ohne diese Nachfrage aus Ostdeutschland im dritten Vierteljahr statt um 5,5 Prozent nur um 4 Prozent gewachsen.

Rekord bei den Ausrüstungsinvestitionen

Ein Rekordergebnis kann 1990 bei den *Ausrüstungsinvestitionen* verzeichnet werden: In den ersten drei Quartalen investierten die westdeutschen Unternehmen *real* (um die Preissteigerungsrate bereinigt) rund 13 Prozent mehr in Ausrüstungen (Produktionsapparaturen, Maschinen, Geräte, Nutzfahrzeuge und so weiter) als ein Jahr zuvor. Für das ganze Jahr 1990 kann eine reale Zuwachsrate von etwa 12,5 Prozent angenommen werden. Wegen der hohen Kapazitätsauslastung der Unternehmen sind die Investitionsentscheidungen zum großen Teil auf Erweiterungen der Produktionsanlagen ausgerichtet. Zugleich spielt aber auch die Modernisierung der Anlagen in Vorbereitung auf die Einführung des EG-Binnenmarktes Ende 1992 eine wichtige Rolle.

Mit dem Boom im Bereich der Ausrüstungsinvestitionen konnten die *Bauinvestitionen* bei weitem nicht mithalten, obwohl ein enormer Bedarf an Neubauten und Renovierungen, vor allem im Wohnungsbau besteht. Für das ganze Jahr 1990 erwarten sowohl die Forschungsinstitute als auch der Sachverständigenrat eine *reale* Zunahme der Bauinvestitionen um 5,5 Prozent. Etwa im gleichen Umfang ist der gewerbliche Hochbau gewachsen, erheblich schwächer der öffentliche Bau (um rund 1,5 Prozent). Mit real 8 Prozent Zuwachs stieg der Wohnungsbau überdurchschnittlich. Es ist allerdings zu bedenken, daß damit noch längst nicht die Wohnungsbauleistungen erreicht werden, die bis Anfang der achtziger Jahre zu verzeichnen waren. Jetzt rächt es sich, daß sich die konservative Bundesregierung Mitte der achtziger Jahre aus dem sozialen Wohnungsbau völlig zurückgezogen hatte; erst unter dem Druck der riesigen Übersiedler- und Aussiedlerzahlen und der dadurch entstandenen großen Wohnungsnot hat sie diese Politik revidiert. Inzwischen waren jedoch in der Bauwirtschaft die Produktionskapazitäten stark reduziert worden. Die Zahl der Baufirmen und der Beschäftigten ist erheblich zurückgegangen. Heute, bei einem jährlichen Bedarf von rund 400 000 Neubauwohnungen, reicht die Produktionskapazität bei weitem nicht aus. Die Folge sind

starke Preissteigerungen. Im Baugewerbe werden die Preise 1990 um 7 bis 8 Prozent höher sein als im Vorjahr. Die stark gestiegenen Zinsen machen sich natürlich ebenfalls verteuern bemerkbar; sie dürften zu einer Dämpfung der Nachfrage führen und den Mangel an bezahlbaren Wohnungen eher noch vergrößern.

Der Export ist kein Wachstumsmotor mehr

Der Export war in den letzten Jahren der starke Wachstumsmotor. Noch 1989 stieg die *Warenausfuhr* real um rund ein Zehntel an. Die bundesdeutsche Wirtschaft profitierte von der Expansion des Welthandels - 1989 betrug die reale Zuwachsrate 7 Prozent - und insbesondere von der lebhaften Investitionstätigkeit in den Industrieländern. Inzwischen haben sich gerade in diesen Ländern Investitionstätigkeit und Wirtschaftswachstum abgeschwächt, und der Welthandel weitet sich nicht mehr so stark aus. Daraus ergibt sich für die Bundesrepublik, daß die Ausfuhr als Wachstumsmotor ausgefallen ist. In preisbereinigter (realer) Rechnung hat der Warenexport aus der „alten“ Bundesrepublik im dritten Vierteljahr nur noch geringfügig zugenommen. Gleichzeitig stiegen aber die realen Warenimporte um 4,5 Prozent. Etwa die Hälfte dieses Zuwachses ist auf Importe zurückzuführen, die im Zusammenhang mit Käufen ostdeutscher Privathaushalte in Westdeutschland getätigt wurden (zum Beispiel im Elektronikbereich und bei Kraftfahrzeugen).⁴ Für das ganze Jahr 1990 hat das DIW einen realen Zuwachs der Ausfuhr von rund 2 Prozent angenommen, während die reale Einfuhr um etwa 10 Prozent höher war als 1989.⁵

Die in den vergangenen Jahren extrem hohen Überschüsse der Bundesrepublik im Außenhandel und in der außenwirtschaftlichen Leistungsbilanz werden sich rasch erheblich vermindern. Leider sind die Statistiken darüber wenig aussagefähig, da die ehemalige DDR zur Zeit noch als Ausland behandelt wird. Der Sachverständigenrat schätzt, daß sich 1990 der Außenhandelsüberschuß um mehr als 20 Milliarden DM (1989: 134,6 Milliarden DM), der Überschuß in der Leistungsbilanz um rund 30 Milliarden DM (1989: 104 Milliarden DM) verringert hat.⁶

Rund 53,3 Prozent des Bruttosozialprodukts entfallen auf den *privaten Verbrauch*. Im Jahre 1990 war er eine wesentliche Wachstumsstütze. Die reale Zuwachsrate des privaten Verbrauchs war mit 4,5 Prozent ebenso hoch wie die des Sozialprodukts. 1989 war dagegen der private Verbrauch (mit 1,7 Prozent) noch nicht einmal halb so stark gewachsen wie das Sozialprodukt. Daß sich der private Verbrauch 1990 soviel besser entwickelte als 1989, ist hauptsächlich auf eine erheblich stärkere Zunahme der verfügbaren Einkommen der privaten Haushalte - 8 Prozent im Jahre 1990 gegenüber 4,5 Prozent 1989 - zurückzuführen.

4 DIW-Wochenbericht vom IS. 11.1990, S. 647.

5 DIW-Wochenbericht vom 13.12.1990, S. 699/700.

6 Jahresgutachten 1990/91, a. a. O., Textziffer 154.

Skandalöse Benachteiligung der Arbeitnehmereinkommen bleibt bestehen

Die *Brutto- und Gehaltssumme* im Jahre 1990 ist, verglichen mit 1989, um 7,5 Prozent gestiegen. In diesem Anstieg kommen allerdings nicht nur Lohnerhöhungen zum Ausdruck, sondern auch eine Zunahme der Zahl der beschäftigten Arbeitnehmer um etwa 700 000 Personen. *Je Beschäftigten* stieg die Brutto- und -gehaltssumme 1990 um 5 Prozent. Daß die *Nettolöhne und -gehälter* im Durchschnitt der Beschäftigten 1990 sogar um 8,5 Prozent höher sind als 1989, ist die Folge der Anfang 1990 wirksam gewordenen Steuerentlastungen.

Die Nettogewinne der Selbständigen sind 1990 allerdings eher noch etwas mehr gestiegen als die durchschnittlichen Nettolöhne. Nach den Prognosen *werden die Gewinne auch 1991 den Löhnen voraussehen*, zumal die Löhne dann wieder voll von der Steuerprogression erfaßt werden. Nach Berechnungen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nahmen die *realen* Bruttogewinne von 1982 - dem Jahr der „Wende“ - bis 1990 um 86 Prozent zu, die Brutto- und -gehaltssumme stieg nur um 13 Prozent. Durch die Steuerpolitik der Bundesregierung wurde diese Einkommensentwicklung noch ungerechter und geradezu skandalös. *So explodierten die realen Nettogewinne (von 1982 bis 1990) mit 108 Prozent, während die reale Brutto- und -gehaltssumme nur um 18 Prozent anstieg, je Arbeitnehmer sogar nur um 10 Prozent.*⁷

Die *Verbraucherpreise* waren im ersten Halbjahr 1990 um 2,1 Prozent höher als in der gleichen Vorjahrszeit,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um rund 3 Prozent. Der verstärkte Preisauftrieb ist hauptsächlich auf die kräftige Erhöhung des Ölpreises zurückzuführen, ansonsten sind die Preise trotz der Hochkonjunktur relativ stabil geblieben. Im ganzen Jahr 1990 ist das Verbraucherpreisniveau um rund 2,5 Prozent höher gewesen als 1989. Infolgedessen ist die (reale) Kaufkraft der Nettoarbeitseinkommen je Arbeitnehmer um etwa 6 Prozent gewachsen. Im Jahre 1989 war das *reale* Nettoeinkommen dagegen um mehr als ein Prozent niedriger als 1988.

Die *Zahl der Arbeitslosen* in Westdeutschland wird 1990 im Jahresdurchschnitt rund 1,9 Millionen betragen. Das sind knapp 150 000 weniger als 1989. Zum ersten Mal seit 1982 wird damit die Zwei-Millionen-Marke wieder unterschritten. Aber diese Arbeitslosigkeit (Arbeitslosenquote 7,2 Prozent) ist in einer Zeit des Booms viel zu hoch, auch wenn man berücksichtigt, daß die Zahl der Erwerbspersonen seit 1982 um 1,6 Millionen zugenommen hat. Immer noch zu hoch ist insbesondere die Zahl der Langzeitarbeitslosen, also derjenigen Personen, die ein Jahr und länger arbeitslos sind. Sie kann mit mindestens einer halben Million angenommen werden.

Das *nominale* (die Preissteigerungen enthaltende) *Bruttosozialprodukt* betrug 1990 in der „alten“ Bundesrepublik 2 440 Milliarden DM.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urde nur ein Zehntel dieses Betrages erwirtschaftet: 243,5 Milliarden DM. Das Verhältnis der Erwerbstätigenzahlen war dagegen 10:3.

⁷ Informationen zur Wirtschafts- und Strukturpolitik, Nr. 7/1990, herausgegeben von der Abt. Wirtschafts- und Strukturpolitik im DGB-Bundesvorstand, S. 7.

Auch dieser Zahlenvergleich ist kennzeichnend für den hohen Produktivitätsabstand zwischen West- und Ostdeutschland.

Dramatischer Rückgang von Produktion und Beschäftigung im Osten

Mit dem Inkrafttreten des Staatsvertrages zu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und der Einführung der D-Mark am 1. Juli 1990 wurde die Kommandowirtschaft der DDR von heute auf morgen von der Marktwirtschaft abgelöst. Die großenteils marode DDR-Wirtschaft wurde ohne Übergang dem scharfen Wettbewerb mit der westdeutschen Wirtschaft und mit der Weltwirtschaft ausgesetzt, „Daß ein solcher Systemwechsel mit enormen Umstellungsschwierigkeiten verbunden sein würde, war erwartet worden, wenn auch nicht in der Schärfe, mit der sie nun zutage treten“, stellen die Wirtschaftsforschungsinstitute in ihrem Herbstgutachten fest.⁸ Der Absatz heimischer Produkte ist in Ostdeutschland radikal zurückgegangen, aber nicht als Ergebnis schrumpfender Nachfrage. Die Nachfrage war im Herbst nur wenig niedriger als vor einem Jahr. Die Verbraucher in Ostdeutschland kauften jedoch in großem Umfang Waren aus dem Westen; die DDR-Produkte sind nicht wettbewerbsfähig. Die Nachfrage nach heimischen Produkten sank so radikal, daß einige Bereiche ihre Produktionstätigkeit nahezu vollständig einstellten. Zudem erlitten ostdeutsche Betriebe nach Wegfall der Exportsubventionen erhebliche Absatzeinbußen im Ausland. Die Handelsbeziehungen zu den osteuropäischen Ländern wurden gestört; die allgemein unsichere Lage in Osteuropa, die zunehmende Zahlungsunfähigkeit osteuropäischer Unternehmen, das nachteilige Verrechnungssystem mit dem Transferrubel und seine beabsichtigte Ersetzung durch eine konvertierbare Währung führen zu großen Schwierigkeiten.

Im Ergebnis sind Produktion und Beschäftigung in Ostdeutschland drastisch gesunken. Die Industrieproduktion ging dramatisch zurück: um knapp die Hälfte. Aber auch im Handel, im Verkehrsbereich sowie im Baugewerbe gab es kräftige Einbußen. Viele Betriebe werden zur Zeit noch durch Liquiditätskredite der Treuhandanstalt am Leben erhalten. Die Wirtschaftsforscher schätzen, daß das nominale Bruttoinlandsprodukt in Ostdeutschland im zweiten Halbjahr 1990 um mindestens ein Viertel, vielleicht sogar um 30 Prozent niedriger war als ein Jahr zuvor.

2,8 Millionen arbeitslos oder in Kurzarbeit

Das hat zu einem Beschäftigungseinbruch geführt, der seinen Niederschlag mehr noch als in Arbeitslosigkeit in Kurzarbeit gefunden hat. Das DIW schätzt, daß am Jahresende 1990 die Zahl der Arbeitslosen etwa 800 000, die der Kurzarbeiter rund 2 Millionen betragen dürfte. Damit würden etwa ein Viertel der Erwerbstätigen kurzarbeiten. Geschätzt wird, daß die Kurzarbeiter im Durch-

⁸ Herbstgutachten, a. a. O. S. 613. Siehe zur Wirtschaftslage in Ostdeutschland auch DIW-Wochenbericht vom 15. 11. 1990, S. 652 bis 654 sowie „Zu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Lage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in WSI-Mitteilungen, H. 11/90, S. 707 ff.

schnitt nur etwa die Hälfte der normalen Arbeitszeit leisten. Es gibt also eine hohe verdeckte Arbeitslosigkeit.

Eine Wirtschaftskrise dieser Art, wenn auch nicht in so starkem Ausmaß, ist Anfang 1990 von vielen Wirtschaftsforschern und Wirtschaftspolitikern für den Fall vorausgesagt worden, daß die D-Mark und zugleich die Marktwirtschaft schlagartig in der DDR eingeführt würden, so wie es dann am 1. Juli geschah. Eine große Mehrheit der Sachverständigen und der Institute im Bereich der Ökonomie, mit der Bundesbank an der Spitze, sprachen sich für eine längerfristige, schrittweise Anpassung der DDR-Wirtschaft an marktwirtschaftliche Bedingungen aus, wobei die Einführung der D-Mark erst ziemlich oder ganz am Ende des Prozesses erfolgen sollte. Sie trugen schwere Bedenken vor, als das Bundeskabinett auf Betreiben des Bundeskanzlers am 7. Februar 1990 beschloß, der DDR-Regierung die baldige Einführung einer Währungsunion anzubieten.⁹ Es ist interessant, heute (Anfang Dezember - gerade erst zehn Monate später) noch einmal zu lesen, mit welchen Argumenten eine schrittweise Anpassung der DDR-Wirtschaft bei gleichzeitigem Währungsue**rbund** begründet wurde. Die DDR-Mark sollte mit einem - im Rahmen einer Bandbreite - festen Wechselkurs an die D-Mark gekoppelt werden, ähnlich dem Europäischen Währungssystem oder der Bindung des österreichischen Schillings an die D-Mark.

Nur die schnelle Einführung der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versprach Erfolg

In dieser Argumentation wurden der tatsächliche Zustand der DDR-Wirtschaft, die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Strukturen in der DDR sowie die außenpolitischen Gegebenheiten falsch eingeschätzt.¹⁰ Nachdem am 9. November 1989 die Grenzmauern brachen, und in den folgenden Tagen und Wochen nahezu die ganze DDR-Bevölkerung für einen Tag oder einige Tage nach Westdeutschland oder nach West-Berlin kamen und hier mit ihrem Besuchergeld West-Waren kauften, gab es keine Zukunft mehr für eine eigenständige DDR. Der Wille des DDR-Volkes nach Wieder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wurde immer stärker. Die DDR-Mark verlor bei den Bürgern weiter an Akzeptanz; die D-Mark wurde zur eigentlichen Währung. Die staatliche Autorität zerfiel; die von der SED geschaffenen Strukturen brachen zusammen. Anstelle der vorher totalen Herrschaft entstand ein Vakuum. Wer konnte ernstlich erwarten, daß bei diesen Gegebenheiten eine DDR-Regierung

⁹ Frühe Forderungen nach einer schnellen Einführung der D-Mark gab es allerdings auch in der SPD: Bereits im Januar 1990 hatten die finanzpolitische Sprecherin der SPD-Bundestagsfraktion, Ingrid Matthäus-Maier, und der wirtschaftspolitische Fraktionssprecher, Wolfgang Roth, eine baldige Währungsunion vorgeschlagen. Ebenfalls dafür sprach sich damals der Hamburger Finanzsenator und frühere Präsident des DPvV, Prof. Hans-Jürgen Krupp (SPD) aus. Im späteren Verlauf des Jahres, insbesondere während der Wahlkampfzeit, verzichtete die SPD auf Hinweise auf diese frühzeitigen Plädoyers für eine rasche Einführung der D-Mark.
¹⁰ Ein Beispiel hierfür ist der Brief des Sachverständigenrates vom 9.2.1990 an den Bundeskanzler, abgedruckt im jüngsten Jahresgutachten des Sachverständigenrates, a. a. O., S. 306 ff. Bei der Beurteilung der Plädoyers für eine allmähliche Anpassung ist freilich zu bedenken, daß Anfang des Jahres weit überwiegend angenommen wurde, die Sowjetunion würde die DDR nicht so schnell in ein vereintes Deutschland entlassen, wie es dann tatsächlich geschah.

Reformen hin zur Marktwirtschaft einführen würde oder könnte? Die Regierung Modrow wollte es nicht, und die am 18. März gewählte, erstmals demokratisch legitimierte Regierung de Maiziere wollte, übereinstimmend mit der großen Mehrheit der Bevölkerung, die rasche Einführung der D-Mark und nicht die langsame Anpassung.

Dieser Weg wäre auch deswegen unrealistisch gewesen, weil - guten Willen der Regierung vorausgesetzt - gar kein Management und kein Fachpersonal vorhanden waren, um marktwirtschaftliche Reformen und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wirksam einführen zu können. Wer hätte denn die Unternehmen privatisieren und wettbewerbsfähig machen können? Welche stärkeren Anreize als jetzt hätten denn westliche Privatanleger gehabt, in der DDR zu investieren? Und hätte nicht ein Wechselkurs von vielleicht 1:4—das heißt bei einem DDR-Durchschnittslohn von umgerechnet etwa 350 DM - einen riesigen Strom von Fachkräften, die in der DDR dringend benötigt werden, nach Westdeutschland zur Folge gehabt? Schließlich: Erforderte nicht der offensichtliche Zerfall der Sowjetunion, der Bankrott des gesamte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Systems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in Osteuropa ein rasches politisches Handeln in Richtung eines vereinigten Deutschlands? Hätte der „langsamere“ Weg nicht auch viele Milliarden DM gekostet, ohne daß die Bundesregierung unmittelbaren Einfluß auf eine wirksame Verwendung der Finanzmittel gehabt hätte? Die Fragen ließen sich noch vermehren. Jedenfalls drängt sich der Schluß auf, daß es zur raschen Einführung der D-Mark und dem daraus logisch folgenden schnellen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 keine realistische Alternative gab.

Der Bankrott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ist die Ursache der Krise

Indessen ist nicht der schlagartige Systemwechsel die Ursache für die derzeitige schlimme Wirtschaftskrise, sondern der Bankrott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in ganz Ost- und Südosteuropa. Die Krise macht deutlich, wie sehr die kommunistischen Machtha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in ihrem europäischen Machtbereich ruiniert haben: die Produktionsanlagen größtenteils veraltet und in schlechtem Zustand, eine völlig vernachlässigte mangelhafte Infrastruktur, jahrzehntelanger Raubbau an der Umwelt, eine verfallende Bausubstanz, ein riesiger Produktivitätsabstand zur „alten“ Bundesrepublik, völlig ungenügende Wettbewerbsfähigkeit auf den Weltmärkten, ein im Vergleich zum Westen miserables Warenangebot, ständige Versorgungsengpässe, ein absurdes Preissystem, wo bei einer Vielzahl von Waren die Verkaufspreise weit unter den Einkaufspreisen lagen, sowie ein leistungshemmendes Lohn- und Gehaltssystem. Diese Mißwirtschaft ist zusammengebrochen - und die schädlichen Folgen hat jetzt die Bevölkerung in Ostdeutschland zu tragen.

Aber sie trägt sie nicht alleine: Sie wird massiv von der wirtschaftsstarken „alten“ Bundesrepublik unterstützt, deren Bürger einen Teil der Last mittragen. Die Bürg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können die Gewißheit haben,

nach einer krisenhaften Übergangszeit in wenigen Jahren voll am Volkswohlstand in einem Staat teilzuhaben, der zu den reichen Staaten der Welt gehört. Dies ist der wesentliche Unterschied in der Lebenslage zu den ost- und südosteuropäischen Staaten, die sich mit eigener Kraft aus dem Sumpf ziehen müssen.

Die D-Mark allein schafft es nicht

Wenn es auch keinen Zweifel daran geben kann, daß die jahrzehntelange Mißwirtschaft der kommunistischen Machthaber und der Zusammenbruch ihres Systems die Ursache der derzeitigen Wirtschaftskrise im Osten ist, so ist es aber auch wahr, daß gravierende Fehler der westdeutschen Wirtschaftspolitik die Krise unnötig verschärft haben. Die Fehler wurden infolge der naiven Vorstellung des Bundeskanzlers, seines Wirtschaftsministers und der meisten konservativen Politiker begangen, daß die Einführung der D-Mark und der Marktwirtschaft - begleitet von der westdeutschen Sozialgesetzgebung - im wesentlichen ausreichen würden, um in Ostdeutschland den Anstoß für ein „Wirtschaftswunder“ wie in den fünfziger Jahren in Westdeutschland zu geben. Der Bundeskanzler sagte am 6. April 1990 wörtlich: „Wie in der Bundesrepublik nach dem zweiten Weltkrieg kann auch in der DDR die soziale Marktwirtschaft aus dem Nichts funktionieren, wenn die Weichen richtig gestellt werden.“ Die Konservativen haben ein blindes Vertrauen in die Selbstregulierungskräfte des Marktes; die Marktwirtschaft bringt nach ihrer Meinung an sich bereits Wohlstand für alle. Staatliche Eingriffe in den Wirtschaftsablauf werden abgelehnt und als „kollektivistisch“ denunziert.

Inzwischen mußten die Konservativen eine Erfahrung machen, von der sie eigentlich hätten wissen müssen: daß der Markt zur Stärke tendiert - und der wirtschaftlich Starke ist die „alte“ Bundesrepublik. Die verantwortlichen konservativen Politiker in Bonn haben wohl inzwischen begriffen, daß der - noch dazu schlagartige - Übergang von einer seit 40 Jahren bestehenden Kommandowirtschaft in eine mit dem Weltmarkt unmittelbar verbundene Marktwirtschaft eine ungeheure politische Gestaltungsaufgabe ist. Dieser in der Geschichte bisher einmalige Umwandlungsprozeß erfordert eigentlich die gemeinsame Anstrengung aller bedeutende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Kräfte. Durch das untätige „Warten auf den Markt“ wurde indessen kostbare Zeit vertan. *Aktive Wirtschaftspolitik ist das Gebot der Stunde.* Die ostdeutsche Wirtschaft muß zunächst durch staatliche Politik für den internationalen Wettbewerb fit gemacht werden; erst dann kann sich die Marktwirtschaft zum Nutzen der ganzen Bevölkerung auswirken.

Im übrigen führt der Vergleich mit der westdeutschen Währungsreform von 1948 in die Irre. Die damalige Situation in Westdeutschland war grundverschieden von der in der DDR im Sommer 1990. Die wirtschaftspolitische Aufgabe der Systemumstellung ist jedenfalls unvergleichlich schwieriger und bedarf schon deshalb einer entschiedenen politischen Steuerung. Zudem: Auch Anfang der fünfziger Jahre - zu Zeiten Ludwig Erhards - war es so, daß

die Einführung der Marktwirtschaft und der wirtschaftliche Wiederaufbau durch massive staatliche Eingriffe unterstützt wurden, vor allem in Form von Steuervergünstigungen, Investitionszulagen und anderen Finanzhilfen.¹¹

Investitionsförderung - aber keine allgemeine Steuersenkung

Sehr nützlich waren damals Sonderabschreibungen und gezielte Investitionszulagen. Sie bewirkten einen hohen Anstieg der Investitionen in den begünstigten Wirtschaftsbereichen innerhalb weniger Jahre. Diese Instrumente werden auch jetzt in Ostdeutschland eingesetzt; sie sollten verstärkt angewendet werden. Überlegenswert ist eine ähnliche Regelung wie die bisherige Berlinförderung; die Regierung ist gehalten, die Finanzmittel für bestimmte förderungswürdige Investitionen zu verwenden. Eine allgemeine Senkung der Unternehmenssteuern in Ostdeutschland, wie sie die FDP unter dem Stichwort „Niedrigsteuerland“ fordert, ist jedoch abzulehnen. Dies wäre eine Steuersubvention nach dem Gießkannenprinzip, die im Hinblick auf die riesigen Kosten der Einheit nicht verantwortet werden kann.

Damit ist ein Thema angesprochen, daß im Bundestagswahlkampf eine große Rolle gespielt hat - und das dann doch nicht wahlentscheidend wurde. Die Bundesregierung hatte zunächst behauptet, die Einheit würde nur geringe Kosten verursachen. Später ließ sie die Bürger wissen, daß zwar doch höhere Kosten entstehen würden, diese aber durch Kredite gedeckt werden könnten. Das war eine Wählertäuschung. Tatsächlich wird der Einigungsprozeß zu riesigen finanziellen Belastungen führen, und es kann gar kein Zweifel darüber bestehen, daß Kreditaufnahmen allein zur Finanzierung nicht ausreichen werden.

Planvolle Wirtschaftspolitik ist nötig

Wegen der Verpflichtung des Staates zur Einheitlichkeit der Lebensverhältnisse in der Bundesrepublik sind in den nächsten Jahren starke Finanzhilfen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und damit außerordentlich hohe Belastungen der öffentlichen Haushalte unabweisbar. Aber die Grenzen der finanziellen und wirtschaftlichen Belastbarkeit der Bundesrepublik dürfen nicht überschritten, die Bereitschaft der Bevölker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ie Lasten mit zu tragen, nicht überstrapaziert werden - schließlich gibt es auch hier Massenarbeitslosigkeit, Wohnungsnot und eine seit der „Wende“ von 1982 enorm gewachsene „neue Armut“. Um so notwendiger sind eine planvolle Wirtschaftspolitik, das Setzen von Prioritäten sowie Gerechtigkeit bei der Belastung der Bürger durch Erhöhungen von Steuern und Abgaben, aber auch bei der Einsparung öffentlicher Mittel.

Zu einer planvollen Wirtschaftspolitik gehören insbesondere: - Die zügige Privatisierung und gegebenenfalls Sanierung der Staatsbetriebe durch die Treuhandanstalt.

¹¹ Siehe u. a. Günter Pehl, Steuer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öln 1962 - J. Muscheid, Die Steuer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9 -1982, Berlin 1986.

- Die Beseitigung des immer noch größten Investitionshemmnisses: der Unsicherheit über die Eigentumsverhältnisse. Arbeitsplatzschaffende Investitionen müssen vor der Klärung der Eigentumsverhältnisse Vorrang haben. Die Gemeinden müssen in die Lage versetzt werden, Investoren attraktive Gewerbenutzungsflächen anbieten zu können. Die Interessenten der Eigentümer können später durch Grundstücktausch oder Entschädigung befriedigt werden.¹²
- Die zügige Beseitigung des Investitionshemmnisses Nr. 2, nämlich der miserablen Infrastruktur. Sie muß zügig modernisiert werden, insbesondere die Telekommunikation.
- Eine gut funktionierende, qualifizierte Verwaltung, insbesondere in den Gemeinden.
- Die Anwerbung von Führungspersonal für Wirtschaft und Verwaltung in Westdeutschland für eine befristete Tätigkeit in Ostdeutschland.
- Die Qualifizierung von Fachpersonal in Wirtschaft und Verwaltung, insbesondere im juristischen und betriebswirtschaftlichen Bereich.
- Eine ausreichende Finanzausstattung der Gemeinden, die die Hauptträger der öffentlichen Investitionen sind.
- Eine umfassende Wohnungsbau- und Wohnungssanierungspolitik.
- Gründung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mschulungs- und ABM-Maßnahmen, Klärung der Frage der Altschulden sowie der Umweltbelastung sind weitere Themen von größter Dringlichkeit.

Vieles ist bereits auf den richtigen Weg gebracht worden. Aber man hat doch den Eindruck, daß manches zügiger angepackt, anderes besser koordiniert werden könnte, daß ein Gesamtkonzept der öffentlichen Hände von Vorteil wäre. Eine ineffektive Verwendung der knappen Finanzmittel oder gar eine Verschwendung kann sich die Bundesrepublik jedenfalls nicht leisten.

Prognosen für 1991

Aber selbst wenn dies alles entschlossen, sinnvoll und zügig vorangebracht wird, wird in Ostdeutschland der Weg aus der Talsohle doch nur langsam durchschritten werden können. Ob die Talsohle bereits im Frühjahr oder Sommer 1991 überhaupt erreicht sein wird, wird unterschiedlich vorausgeschätzt. Mehr scheint meines Erachtens für den Herbst als dem frühesten Zeitraum zu sprechen, von dem an es langsam wieder aufwärts gehen kann.

Die Wirtschaftsinstitute nehmen in ihrem Herbstgutachten an, daß das reale Bruttosozialprodukt Ostdeutschlands im Jahresdurchschnitt 1991 nochmals um ungefähr ein Zehntel geringer sein wird als 1990. Allerdings rechnen sie ebenso wie der Sachverständigenrat damit, daß sich die Investitionstätig-

¹² In diesem Zusammenhang drängt sich die Frage auf, ob und inwieweit die Eigentumsgarantie nach Art. 14 GG für Vorgänge gelten kann, die in einem Gebiet mit anerkannt eigener Staatlichkeit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Grundgesetzes geschahen. Siehe hierzu eine interessante Übersicht im Handelsblatt vom 2.11.1990 über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innerstaatlichen Eingriffen, die von früheren Rechtsträgern der deutschen Staatsgewalt zu verantworten seien.

keit im Laufe des Jahres deutlich beleben wird. Einen kräftigen Zuwachs erwarten sie bei der Bautätigkeit. Dagegen wird die private Verbrauchernachfrage eher rückläufig sein. Das hängt damit zusammen, daß sich die erwartete wirtschaftliche Trendwende auf dem Arbeitsmarkt erst im Herbst 1991 oder wahrscheinlicher - 1992 positiv auswirken wird. Im Jahresdurchschnitt rechnen die Institute mit einer Abnahme der Beschäftigungszahl gegenüber 1990 um fast zwei Millionen auf nur noch 6,5 Millionen. Die Arbeitslosenzahl wird voraussichtlich auf 1,4 Millionen steigen, die Zahl der Kurzarbeiter auf 1,7 Millionen. Es wird mindestens 300 000 Pendler von Ost nach West geben (1990: 70 000).

Auch 1991 wird die Wirtschaftsentwicklung in Westdeutschland genau entgegengesetzt verlaufen. Das Wachstumstempo wird sich zwar abschwächen, aber immer noch hoch sein, höher als in fast allen anderen vergleichbaren Industriestaaten. Das *reale Bruttoinlandprodukt* wird nach der Vorausschätzung des Sachverständigenrates um etwa 3,5 Prozent steigen. Die Ausrüstungsinvestitionen nehmen weiterhin am stärksten zu, während sich der private Verbrauch abschwächt; er wächst nur im Gleichschritt mit dem Sozialprodukt, obwohl die Zahl der beschäftigten Arbeitnehmer um nochmals etwa 500 000 zunehmen wird. Aber die Nettolohn- und -gehaltssumme wird nur noch um etwa 5 Prozent steigen. Bei einem erwarteten Anstieg der Verbraucherpreise von mindestens 3,5 Prozent bleibt real nur noch ein Zuwachs um 1,5 Prozent übrig. Die Kaufkraft des *Nettolohns je Beschäftigten* wird sich 1991 gegenüber 1992 kaum erhöhen.

Der Schwachpunkt in der wirtschaftlichen Konstellation des Jahres 1991 dürfte das *Ausfuhrgeschäft* sein. Die Auslandsnachfrage hat sich drastisch verringert, die Konjunktur in den meisten Handelspartnerländern läßt nach, und der Welthandel schwächt sich ab. Von der Weltwirtschaft gehen auch die Risiken im neuen Jahr aus: Golfkrise, damit zusammenhängend die Entwicklung der Ölpreise, sowie die Rezessionsgefahr in den USA. Nicht voraussehbar sind schließlich die Folgen, die sich für Europa aus der chaotischen Entwicklung in der Sowjetunion mit der Gefahr von Bürgerkrieg und Diktatur ergeben können.

문서 번호 53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도입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

1991 년 1 월 2 일

담당자 / 기관: 연방회의,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 재무장관이 연방회의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농림산업부 장관이 신청한 오천만 마르크의 추가예산을 집행 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추가예산을 집행하게 된 이유는 동쪽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적 발전이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해서 투자금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Bundesrat, Drucksache 3/91

02.01.91

Fz

Unterrichtung

durch den Bundesminister der Finanzen

Haushaltsführung 1990

Überplanmäßige Ausgabe bei Kapitel 6002 Titel 548 01 (Abschnitt B)
- Unvorhergesehene Ausgaben im Zusammenhang mit der Einführung der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II A 5 - AF 0421 - 301/90 II

Bonn, den 2. Januar 1991

An den
Präsidenten des Bundesrates

Gemäß § 37 Abs. 4 BHO teile ich mit, daß ich auf Antrag des Bundesminister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meine Einwilligung nach Art. 112 GG erteilt habe, im Haushaltsjahr 1990 bei Kap. 6002 Tit. 548 01 - Abschnitt B - eine überplanmäßige Ausgabe bis zur Höhe von

50 Mio DM

(in Worten: fünfzig Millionen Deutsche Mark)

zu leisten.

Die überplanmäßige Bereitstellung der Mittel war erforderlich, weil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r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LPG'en) in dem in Art. 3 des

- 2 -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ungünstiger als erwartet verlaufen ist und die LPG'en deshalb nicht in der Lage sind, bestehende Zinsverpflichtungen aus Investitionskrediten zu erfüllen.

In Vertretung

A handwritten signature in cursive script, appearing to read 'M. Carstens'.

Manfred Carstens

문서 번호 54

마크 도입과 관련한 대차대조법의 개정 발표

1941 년 4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연방법무부 장관 클라우스 킹켈, 신탁청

내용:

이 문서는 1991 년에 연방정부 법무장관의 명의로 발표된 개정안으로 기업의 자본금과 재정결산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 년 7 월 1 일에 동독에 본사를 두었고 상업법에 따라 회계의무를 갖는 기업은 19970 년 7 월 1 일 화폐교환 당시 DM-대차대조표와 시설 장비목록 그리고 정산방식과 평가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조치는 국영 콤비나트와 기업, 독립적인 시설 그리고 기타 경제단위로 등록된 모든 단체, 인민소유 재산과 동독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동독 국영기업의 지사, 주식회사로 전환과정에 있는 기업 외에 지자체의 모든 경제관련 단체에 해당한다. 1991 년 6 월 30 일까지 현재 창립 또는 전환 과정에 있는 기업은 1990 년 7 월 1 일에 창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기업은 나아가 상법 240 조에 따라 1990 년 7 월 1 일자로 시설장비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990 년 7 월 30 일 이후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이전받은 기업은 이전받은 재산도 목록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업의 토지와 건물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또는 계약에 의해 제약조건이 존재할 경우 그것 또한 명시하도록 한다. 국가와 신탁청에 대한 채권 채무는 별도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채무의 경우 용자조건을 설명하도록 한다. 화폐교환시의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해 재산과 채무를 다시 평가하도록 한다.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중립적인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동독의 경제부가 추천하였던 가치평가기준에 따라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1990 년 7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동독 마르크화로 결정된 채권은 2:1 의 교환비율로 도이치마르크로 전환한다. 임대료와 임차료 등과 같이 1990 년 6 월 30 일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1 의 비율로 전환한다. 1990 년 7 월 1 일 이전부터 있었던 정부 지출 금액 또한 2:1 로 교환한다. 그 외의 임금, 급여와 장학금, 연금 등은 1:1 의 교환율이 적용된다.

각 기업과 경제기관이 제출한 재정대차대조표와 그 부록에 대한 감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제감사규정에 따라 공인된 회계사와 회계회사에서 진행한다. 연방 법무장관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회의의 동의와 연방정부 재무장관과 경제장관의 동의 하에 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71-993, Ausgabetag 26.04.1991

Bekanntmachung der Neufassung des D-Markbilanzgesetzes

Vom 18. April 1991

Auf Grund des Artikels 14 des Gesetzes vom 22. März 1991 (BGBl. I S. 766) wird nachstehend der Wortlaut des D-Markbilanzgesetzes in der vom 29. März 1991 an geltenden Fassung bekanntgemacht. Die Neufassung berücksichtigt:

1. das am 29. September 1990 in Kraft getretene D-Markbilanzgesetz vom 23. September 1990 (BGBl. 1990 II S. 885, 1169, 1245),
2. den am 29. März 1991 in Kraft getretenen Artikel 4 des eingangs genannten Gesetzes.

Bonn, den 18. April 1991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Kinkel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D-Markbilanzgesetz – DMBilG)**

Inhaltsübersicht

Abschnitt 1	Abschnitt 3
Inventar. Eröffnungsbilanz. Anhang	Kapitalausstattung
Unterabschnitt 1	Unterabschnitt 4
Inventar. Eröffnungsbilanz	Vermögensausgleich und Eigenkapitalsicherung von bisher volkseigenen Unternehmen
§ 1 Pflicht zur Aufstellung	§ 24 Ausgleichsforderungen
§ 2 Inventar	§ 25 Ausgleichsverbindlichkeiten
§ 3 Inventur	§ 26 Eigenkapitalsicherung
§ 3a Nachholung der Inventur	
§ 4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terabschnitt 5
§ 5 Anzuwendende Vorschriften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privater Unternehmen
	§ 27 Neufestsetzung
Unterabschnitt 2	§ 28 Vorläufige Neufestsetzung
Bilanzansatz- und Bewertungsvorschriften	§ 29 Gesellschaftsrechtliche Beziehungen
§ 6 Allgemeine Anforderungen	§ 30 Auflösung von Kapitalentwertungskonten
§ 7 Neubewertung	
§ 8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Unterabschnitt 6
§ 9 Grund und Boden	Vorläufige Gewinnrücklage
§ 10 Bauten und andere Anlagen	§ 31 Vorläufige Gewinnrücklage
§ 11 Finanzanlagen	
§ 12 Vorräte	Abschnitt 4
§ 13 Forderungen	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 14 Kassenbestand, Schecks, Guthaben bei Geldinstituten	§ 32 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 15 Rechnungsabgrenzungsposten	
§ 16 Verbindlichkeiten	Abschnitt 5
§ 17 Rückstellungen	Verfahren
§ 18 Währungsumrechnung	Unterabschnitt 7
	Prüfung
Unterabschnitt 3	§ 33 Prüfung
Anhang. Vergleichende Darstellung	§ 34 Durchführung der Prüfung
§ 19 Anhang	
§ 20 Vergleichende Darstellung	Unterabschnitt 8
	Feststellung und Berichtigung
Abschnitt 2	§ 35 Feststellung
Konzerneröffnungsbilanz. Gesamteröffnungsbilanz	§ 36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 21 Pflicht zur Aufstellung	
§ 22 Konzernanhang	Unterabschnitt 9
§ 23 Vorlage- und Auskunftspflichten	Offenlegung
	§ 37 Offenlegung

Abschnitt 6**Geschäftszweigbezogene Vorschriften**

Unterabschnitt 10

Vorschriften
fü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 § 38 Anwendungsbereich
- § 39 Eröffnungsbilanz
- § 40 Ausgleichsforderungen
- § 41 Ausgleichsverbindlichkeiten
- § 42 Vergleichende Darstellung
- § 43 Prüfung

Unterabschnitt 11

Vorschriften für Versicherungsunternehmen

- § 44 Anwendungsbereich
- § 45 Eröffnungsbilanz
- § 46 Prüfung, Einreichung

Abschnitt 7**Straf- und Ordnungsstrafvorschriften.
Zwangsgelder**

- § 47 Strafvorschriften
- § 48 Ordnungsstrafvorschriften
- § 49 Festsetzung von Zwangsgeld

Abschnitt 8**Steuern, Gebühren**

- § 50 Steuerliche Eröffnungsbilanz und Folgewirkungen
- § 51 Umstellungsbedingte Vermögensänderungen
- § 52 Steuerliche Ausgangswerte in anderen Fällen
- § 53 Wirtschaftsjahre 1990 und steuerliche Schlußbilanz
- § 54 Pensionsrückstellungen
- § 55 Einlagen
- § 56 Gebühren

Abschnitt 9**Verfahren der Kapitalneufestsetzung.
Sonstige Vorschriften**

- § 56a Einfache Mehrheit
- § 56b Inhalt der Anmeldung, Prüfung durch das Gericht
- § 56c Umtausch und Zusammenlegung von Anteilen
- § 56d Überschuldung oder Verlust des halben gezeichneten Kapitals
- § 57 Auflösung
- § 58 Geschäftsjahr

Abschnitt 10**Schlußvorschriften**

- § 59 Ermächtigung
- § 60 Inkrafttreten

Abschnitt 1**Inventar. Eröffnungsbilanz. Anhang**

Unterabschnitt 1

Inventar. Eröffnungsbilanz

§ 1

Pflicht zur Aufstellung

(1) Unternehmen mit Hauptniederlassung (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1. Juli 1990, die als Kaufleute nach § 238 des Handelsgesetzbuchs verpflichtet sind, Bücher zu führen, haben ein Inventar und ein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für den 1. Juli 1990 sowie einen Anhang nach § 19 aufzustellen, der mit der Eröffnungsbilanz eine Einheit bildet. Unternehmen, die ihre Eröffnungsbilanz nicht nach § 37 offenlegen müssen, brauchen einen Anhang nicht aufzustellen.

(2) Als Unternehmen, die nach Absatz 1 zur Führung von Büchern verpflichtet sind, gelten auch

1. volkseigene Kombinate, Betriebe, selbständige Einrichtungen und wirtschaftsleitende Organe, zwischenbetriebliche Einrichtungen und sonstige im Register der volkseigenen Wirtschaft eingetragene Wirtschaftseinheiten sowie volkseigene Güter,
2. Aktiengesellschaften im Aufbau,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m Aufbau,
3. Genossenschaften jeder Art einschließlich kooperativer Einrichtungen,
4. Betriebe mit oder ohne eigene Rechtspersönlichkeit des Staates, der Länder, Kreise, Städte und Gemeinden, die ein Handelsgewerbe im Sinne des § 1 des Handelsgesetzbuchs betreiben, soweit sie nicht zu den in § 4 des Handelsgesetzbuchs bezeichneten Gewerbetreibenden gehören,
5. Anstalten, Stiftungen und Vereine, die ein Handelsgewerbe im Sinne des § 1 des Handelsgesetzbuchs betreiben, soweit sie nicht zu den in § 4 des Handelsgesetzbuchs bezeichneten Gewerbetreibenden gehören,

6. die Deutsche Post,
7. die Deutsche Reichsbahn,
8. Zweigniederlassungen und Betriebsstätten von Unternehmen nach Absatz 1 mit Hauptniederlassung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3) Absatz 1 ist auch auf die Treuhandanstalt und auf in Absatz 1 und 2 bezeichnete Unternehmen anzuwenden, die sich in Abwicklung befinden oder über deren Vermögen das Gesamtvollstreckungsverfahren eingeleitet worden ist.

(4) Führt ein zur Rechnungslegung verpflichtetes Unternehmen den Geschäftsbetrieb eines in Absatz 1 bis 3 bezeichneten Unternehmens im eigenen oder fremden Namen, aber für fremde Rechnung, so hat es auch dessen Pflichten nach diesem Gesetz zu erfüll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5) Zur Rechnungslegung verpflichtete Unternehmen, die bis 30. Juni 1991 durch Gründung, Umwandlung, Verschmelzung, Spaltung oder Entflechtung entstehen, können für die Zwecke dieses Gesetzes als zum 1. Juli 1990 entstanden angesehen werden. Führen Maßnahmen nach Satz 1 dazu, daß ein Unternehmen nicht mehr besteht, so braucht dieses Gesetz auf das untergegangene Unternehmen nicht angewendet zu werden. Satz 2 ist auch anzuwenden, wenn das Unternehmen, das eine Rechtsform im Sinne des Absatzes 2 Nr. 1 oder 3 hat, bis 30. Juni 1991 aufgelöst wird und die Fortsetzung des aufgelösten Unternehmens ausgeschlossen ist.

§ 2

Inventar

Auf das Inventar zum 1. Juli 1990 ist § 240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In das Inventar sind auch solche Vermögensgegenstände aufzunehmen, die dem Unternehmen nach dem 30. Juni 1990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nach § 4 Abs. 1 Satz 1 für die Eröffnungsbilanz aus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unentgeltlich übertragen werden.

§ 3

Inventur

(1) Für die Aufstellung des Inventars braucht eine Inventur zur mengenmäßigen Erfass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nicht durchgeführt zu werden, wenn bei der Inventur zum 30. Juni 1990 die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vollständig aufgenommen und die in Absatz 2 bis 6 enthaltenen Grundsätze beachtet worden sind. Die erst nach dem 30. Juni 1990 erworb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die nach § 2 Satz 2 oder nach § 4 Abs. 3 in das Inventar aufzunehmen sind, sind in die Inventur einzubeziehen oder gesondert aufzunehmen. War der Prüfer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 33 Abs. 1) bei der Inventur nicht anwesend, kann auf eine neue Inventur nur verzichtet werden, wenn der Prüfer die Ordnungsmäßigkeit der Inventur zum 30. Juni 1990 anerkennt.

(2) Die Vermögensgegenstände sind grundsätzlich körperlich zu erfassen. § 241 des Handelsgesetzbuchs darf angewandt werden, Absatz 3 Nr. 1 mit der Maßgabe, daß das Inventar in den ersten vier Monaten des Geschäfts-

jahrs aufgestellt werden kann. Die körperliche Bestandsaufnahme kann bei den Vermögensgegenständen des Anlagevermögens unterbleiben, wenn diese in einer den Grundsätzen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ntsprechenden Weise verzeichnet sind und in den letzten zwölf Monaten eine körperliche Aufnahme stattgefunden hat.

(3) Bei Grundstücken und Gebäuden sind alle gesetzlichen oder vertraglichen Einschränkungen zu erfassen, die sich auf deren Nutzung, Verfügbarkeit oder Verwertung beziehen; es sind außerdem alle bekannten Sachverhalte festzuhalten, aus denen sich finanzielle Verpflichtungen ergeben können.

(4)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ind in besonderen Listen zu erfassen und in einer den Grundsätzen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ntsprechenden Art und Weise nachzuweis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Staat, der Treuhandanstalt, Gesellschaftern und Tochterunternehmen (§ 21 Abs. 1 Satz 1) sind gesondert zu erfassen; der Rechtsgrund ist jeweils anzugeben. Bei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ist der Grund für die Kreditgewährung anzugeben.

(5) In besonderen Listen sind alle Sachverhalte zu erfassen, die zu einer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für ungewisse Verbindlichkeiten oder für drohende Verluste aus schwebenden Geschäften führen können oder für die Rückstellungen nach § 249 Abs. 1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zu bilden sind.

(6) In besonderen Listen sind alle Haftungsverhältnisse, die nach § 251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erken sind, und alle sonstigen finanziellen Verpflichtungen zu erfassen, über die nach § 19 Abs. 3 Nr. 6 im Anhang zu berichten ist, soweit sie nicht nach Absatz 2 bis 5 berücksichtigt sind.

§ 3a

Nachholung der Inventur

(1) Ist die nach § 3 vorgeschriebene Inventur nicht oder nicht ordnungsgemäß durchgeführt worden, so ist eine den Anforderungen des § 3 Abs. 2 bis 6 genügende Inventur auf einen Stichtag innerhalb der Feststellungsfrist nach § 35 Abs. 1 Satz 3 durchzuführen.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muß der Prüfer bei der Inventur anwesend sein. Das Inventar und die Eröffnungsbilanz für den 1. Juli 1990 sind zu berichtigen oder zu ergänzen, wenn sich anhand der neuen Inventu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seit dem 1. Juli 1990 nach § 238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geführten Handelsbücher mengen- oder wertmäßige Abweichungen ergeben. Die Änderungen und Ergänzungen sind im Anhang betragsmäßig anzugeben und zu erläutern.

(2) Bei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 ist im Falle des Absatzes 1 der Bestätigungsvermerk ohne den Hinweis auf die Ordnungsmäßigkeit von Inventar und Inventur zu erteilen und, soweit er aus anderen Gründen nicht einzuschränken oder zu versagen ist, wie folgt zu fassen:

„Die Buchführung,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entsprechen nach meiner/unserer pflichtgemäßen Prüfung den gesetzlichen Vorschrift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vermitteln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

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des Unternehmens. Die Inventur mußte gemäß § 3a des D-Markbilanzgesetzes nachgeholt werden. Ihre Ordnungsmäßigkeit wird bestätigt.“

§ 4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in den ersten vier Monaten des Geschäftsjahrs aufzustellen. Unternehmen,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eine Bilanzsumme von höchstens drei Millionen neu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ausweisen oder die am 1. Juli 1990 höchstens fünfzig Arbeitnehmer beschäftigen, dürf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in den ersten sechs Monaten des Geschäftsjahrs aufstellen, wenn dies einem ordnungsgemäßen Geschäftsgang entspricht.

(2)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haben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im Sinne des § 264 Abs. 2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itteln. Führen besondere Umstände dazu, daß die Eröffnungsbilanz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nicht vermittelt, so sind im Anhang zusätzliche Angaben zu machen, sofern ein solcher aufzustellen ist.

(3) Übertragen Unternehmen zum Zwecke der Neustrukturierung oder Privatisierung bis zum 30. Juni 1991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chulden auf andere Unternehmen, so können die sich daraus ergebenden Änderungen in den Eröffnungsbilanzen und Inventaren der betroffenen Unternehmen, jedoch nur übereinstimmend, berücksichtigt werden. Satz 1 ist auch anzuwenden, wenn alle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eines Unternehmens einschließlich der nach diesem Gesetz vorgesehenen Sonderposten übertragen werden. Auf das verbleibende Unternehmen braucht bei Vermögenslosigkeit dieses Gesetz nicht angewendet zu werden; ist es in einem Register eingetragen, so ist es von Amts wegen zu löschen.

§ 5

Anzuwendende Vorschriften

(1) Auf die Eröffnungsbilanz sind die §§ 243 bis 261 des Handelsgesetzbuchs mit Ausnahme von § 243 Abs. 3, § 247 Abs. 3, §§ 252, 253 Abs. 1 Satz 1, Abs. 4, § 255 Abs. 3, § 256 Satz 1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sie sich auf die Bilanz beziehen und dieses Gesetz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enthält; Angaben über verbundene Unternehmen brauchen nicht gemacht zu werden. Unternehmen, die nicht Einzelkaufmann oder Personenhandels-gesellschaft sind, haben außerdem § 265 Abs. 3 bis 8, §§ 266, 268 Abs. 3 bis 7, §§ 270 bis 272, Genossenschaften die §§ 336, 337 des Handelsgesetzbuchs anzuwenden, soweit dieses Gesetz abweichende Regelungen nicht enthält oder geschäftszweigbezogene Vorschriften über Form und Inhalt der Bilanz nicht zu beachten sind.

(2) Werden in der Eröffnungsbilanz die Größenmerkmale des § 267 Abs. 1 oder 2 des Handelsgesetzbuchs bezüglich der Bilanzsumme oder der Arbeitnehmerzahl nicht überschritten, dürfen kleine Unternehmen die Erleichterungen des § 266 Abs. 1 Satz 3 des Handelsgesetzbuchs und mittelgroße Unternehmen die Erleichterun-

gen des § 327 Nr. 1 des Handelsgesetzbuchs bereits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in Anspruch nehmen.

Unterabschnitt 2

Bilanzansatz- und Bewertungsvorschriften

§ 6

Allgemeine Anforderungen

(1) Bei der Bewertung der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gilt insbesondere folgendes:

1. Bei der Bewertung ist von der Fortführung der Unternehmenstätigkeit auszugehen, sofern dem nicht tatsächliche oder rechtliche Gegebenheiten entgegenstehen.
2. Die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sind zu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einzeln zu bewerten.
3. Es ist vorsichtig zu bewerten, namentlich sind alle vorhersehbaren Risiken und Verluste, die bis zu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entstanden sind, zu berücksichtigen, selbst wenn diese erst zwischen dem Stichtag und dem Tag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bekannt geworden sind; Gewinne sind nur zu berücksichtigen, wenn sie am Stichtag realisiert sind.

(2) Die auf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angewandten Ansatz- und Bewertungsmethoden sind für die folgenden Bilanzen verbindlich, soweit nicht abgewichen werden muß oder eine Abweichung nach § 252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zulässig ist; für die erstmalige Abweichung in einem nachfolgenden Abschluß von einem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übten Wahlrecht bedarf es eines begründeten Ausnahmefalls nicht.

§ 7

Neubewertung

(1) Vermögensgegenstände und Schulden sind neu zu bewerten. Vermögensgegenstände sind mit ihren Wiederbeschaffungs- oder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zen (Neuwert); sie dürfen jedoch höchstens mit dem Wert angesetzt werden, der ihnen beizulegen ist (Zeitwert). Wesentliche Werterhöhungen, die innerhalb von vier Monaten nach dem Bilanzstichtag eintreten, sind zu berücksichtigen. Die bisherige Nutz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ihr Zurückbleiben hinter dem technischen Fortschritt sind bei der Ermittlung des Zeitwerts durch einen Wertabschlag zu berücksichtigen.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angesetzten Werte gelten für die Folgezeit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soweit Berichtungen nach § 36 nicht vorzunehmen sind.

(2) Auf die Ermittlung der Wiederbeschaffungskosten ist § 255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Anschaffungskosten entsprechend anzuwenden. Dabei ist von den Preisverhältnissen im gesamten Währungsgebiet der Deutschen Mark auszugehen.

(3) Auf die Ermittlung der Wiederherstellungskosten ist § 255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Herstellungskosten entsprechend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ie in dessen Satz 3 bezeichneten Aufwendungen einzurechnen sind; Zinsen für Fremdkapital dürfen nicht

angesetzt werden. Der Berechnung der Aufwendungen für den Verbrauch von Gütern und für bezogene Leistungen sind deren Wiederbeschaffungskosten gemäß Absatz 2 und der Berechnung von Aufwendungen für eigene Leistungen die Lohn- und Gehaltsverhältniss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runde zu legen. Erhöhungen der Personalkosten innerhalb der ersten vier Monate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dürfen berücksichtigt werden.

(4) Bei abnutzbaren Vermögensgegenständen ist der Wertabschlag für die bisherige Nutzung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53 Abs. 2 Satz 1 und 2 des Handelsgesetzbuchs zu bemessen. Bei der Festlegung der Nutzungsdauer abnutzbarer Vermögensgegenstände sind die Zeiten zugrunde zu legen, die für die steuerliche Gewinnermittlung ab 1. Juli 1990 anzusetzen sind. Bei abnutzbaren Vermögensgegenständen, deren tatsächliche Nutzung die Nutzungsdauer nach Satz 2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voraussichtlich überschreitet, darf der Wer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längeren Nutzungsdauer angesetzt werden, höchstens jedoch mit der Nutzungsdauer, die vor dem 1. Juli 1990 zulässig war.

(5) Vermögensgegenstände, die im Unternehmen nicht mehr verwendet werden, sind mit dem zu erwartenden Verkaufserlös nach Abzug der noch anfallenden Kosten anzusetzen (Veräußerungswert). Vermögensgegenstände, die noch genutzt werden, aber vor dem 1. Juli 1990 bereits vollständig abgeschrieben worden sind, dürfen höchstens mit ihrem Veräußerungswert angesetzt werden.

(6)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nach dem Vermögensgesetz sind in die Eröffnungsbilanz mit dem Wert aufzunehmen, der dem rückgabepflichtigen Unternehmen nach § 11 oder zurückzugebenden Vermögensgegenständen nach den §§ 8 bis 10 zukommt. In Höhe des aktivierten Betrags ist innerhalb der Gewinnrücklagen eine Sonderrücklage zu bilden, die bis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 8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1) Das Bilanzierungsverbot des § 248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für selbst geschaffene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gilt auch, wenn die Vermögensgegenstände im Wege der Umwandlung vor dem 1. Juli 1990 erworben worden sind. Ein unentgeltlich erworbener Geschäfts- oder Firmenwert darf nicht angesetzt werden; § 31 Abs. 1 Nr. 1 bleibt unberührt.

(2) Entgeltlich erworbene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die technisch oder wirtschaftlich überholt sind, dürfen höchstens mit ihrem Veräußerungswert angesetzt werden.

(3) Statt der Summe der aus der Einzelbewertung der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sich ergebenden Beträge kann der Betrag angesetzt werden, den ein Käufer bei Fortführung des Unternehmens im Rahmen des Gesamtkaufpreises für die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insgesamt zu zahlen bereit wäre. Der Betrag ist, soweit es sich um abnutzbare Vermögensgegenstände handelt,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55 Abs. 4 des Handelsgesetzbuchs abzuschreiben.

§ 9

Grund und Boden

(1) Grund und Boden ist mit seinem Verkehrswert anzusetzen. Dabei darf die Preisentwicklung im gesamten Währungsgebiet der Deutschen Mark bis zu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berücksichtigt werden. Bis zur Bildung von selbständigen und unabhängigen Gutachterausschüssen für die Ermittlung der Grundstückswerte und für sonstige Wertermittlungen können für die Ermittlung des Verkehrswerts die vo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empfohlenen Richtwerte herangezogen werden.

(2) Bestehen Nutzungs-, Verfügungs- oder Verwertungsbeschränkungen, die den Verkehrswert nach allgemeiner Verkehrsauffassung wesentlich beeinträchtigen, so sind diese wertmindernd zu berücksichtigen. Dies gilt auch für künftige Rekultivierungs- und Entsorgungsverpflichtungen, soweit sie den Eigentümer betreffen. Aufwendungen nach Satz 2 dürfen nicht wertmindernd berücksichtigt werd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ird.

(3) Ein unentgeltlich auf mindestens zehn Jahre unentziehbar eingeräumtes grundstücksgleiches Recht darf mit dem Barwert der üblichen Nutzungsentschädigung angesetzt werden, wenn der dazu gehörende Grund und Boden wie Anlagevermögen genutzt wird. Der angesetzte Betrag ist in der Bilanz oder im Anhang gesondert anzugeben.

§ 10

Bauten und andere Anlagen

(1) Gebäude und andere Bauten, technische und andere Anlagen, Maschinen, Betriebs- und Geschäftsausstattung sind mit ihren Wiederherstellungskosten (§ 7 Abs. 3) oder mit ihren Wiederbeschaffungskosten (§ 7 Abs. 2)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ertabschlags für zwischenzeitliche Nutzung (§ 7 Abs. 4), höchstens jedoch mit ihrem Zeitwert (§ 7 Abs. 1 Satz 2) anzusetzen. Unterlassene Instandhaltungen und Großreparaturen zur Erhaltung sind bei der Ermittlung des Zeitwerts wertmindernd zu berücksichtig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nicht gebildet wird.

(2) Als Zeitwert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Vermögensgegenstände kann auch ihr Verkehrswert angesetzt werden. Unterlassene Instandhaltungen und Großreparaturen zur Erhaltung des Vermögensgegenstandes dürfen bei Ansatz des Verkehrswerts nicht wertmindernd berücksichtigt werden, soweit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2 Nr. 1 oder Satz 3 oder Ab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ird.

§ 11

Finanzanlagen

(1) Beteiligungen an einem anderen Unternehmen nach § 1 sind in der Eröffnungsbilanz mit dem Betrag anzusetzen, der dem ausgewiesenen anteiligen Eigenkapital (§ 26 Abs. 1) in der Eröffnungsbilanz dieses Unternehmens entspricht. Steht dem anderen Unternehmen eine Ausgleichsforderung oder eine Forderung auf Einzahlung von Eigenkapital gegen das beteiligte Unternehmen zu, so sind diese unter den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verbundenen Unternehmen gesondert auszuweisen. Andere Beteiligun-

gen sind mit ihrem Verkehrswert anzusetzen. Satz 3 darf auch auf Beteiligungen nach Satz 1 angewandt werden.

(2) Aktien und andere Wertpapiere, die an einer Börse zum amtlichen Handel oder zum geregelten Markt zugelassen oder in den Freiverkehr einbezogen sind, sind mit ihrem Kurswert a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anzusetzen.

(3) Ausleihung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sind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zustellen,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 12

Vorräte

(1) Roh-, Hilfs- und Betriebsstoffe sind mit ihren Wiederbeschaffungs- oder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zen.

(2) Unfertige Erzeugnisse und Leistungen sowie fertige Erzeugnisse sind mit ihren Wiederherstellungskosten anzusetzen. Bei fertigen Erzeugnissen darf, wenn dies einer vereinfachten Ermittlung der Wiederherstellungskosten dient, der Betrag angesetzt werden, der sich ergibt, wenn von den zu erwartenden Erlösen die Vertriebskosten und der zu erwartende Gewinn abgesetzt werden. Dieses Verfahren darf auch auf unfertige Erzeugnisse und Leistungen angewandt werden, wenn die bis zur Fertigstellung zusätzlich anfallenden Kosten, die ebenfalls abzusetzen sind, zuverlässig berechnet werden können.

(3) Waren, die ohne Be- oder Verarbeitung zur Weiterveräußerung bestimmt sind, sind mit den Wiederbeschaffungskosten anzusetzen. Absatz 2 Satz 2 darf entsprechend angewandt werden.

(4) Vorräte nach Absatz 1 bis 3 sind jedoch höchstens mit ihrem Zeitwert (§ 7 Abs. 1 Satz 1) anzusetzen. § 7 Abs. 5 Satz 1 bleibt unberührt.

§ 13

Forderungen

(1)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Forderung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werden, soweit Absatz 2 nichts anderes bestimmt,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2) Abweichend von Absatz 1 werden Mieten und Pachten sowie sonstige regelmäßig wiederkehrende Zahlung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3) Der Grundsatz der Einzelbewertung ist zu beachten. Minderverzinsliche oder unverzinsliche Forderungen sowie zweifelhafte Forderungen sind mit dem niedrigeren beizulegenden Wert anzusetzen; eingeräumte Sicherheiten sind zu berücksichtigen. Pauschalwertberichtigungen wegen des allgemeinen Kreditrisikos sind vom Gesamtbetrag der Forderungen abzusetzen.

(4) Forderungen, die Verbindlichkeiten nach § 16 Abs. 3 und 4 entsprechen, dürfen nicht angesetzt werden.

(5) Ausstehende Einlagen sind, auch wenn sie nicht eingefordert sind, wie Forderungen zu bewerten, jedoch nicht abzuzinsen.

§ 14

Kassenbestand, Schecks, Guthaben bei Geldinstituten

(1) Zahlungsmittel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nur anzusetzen, soweit sie weiterhin gesetzliche Zahlungsmittel sind.

(2) Schecks sind wie Forderungen zu behandeln.

(3) Guthaben bei Geldinstitut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mit dem Betrag anzusetzen, den das Geldinstitut in Deutscher Mark gutbringen muß.

§ 15

Rechnungsabgrenzungsposten

Aktive und passive Rechnungsabgrenzungsposten nach § 250 des Handelsgesetzbuchs sind im Verhältnis von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soweit nicht ein anderes Umstellungsverhältnis vorgeschrieben ist.

§ 16

Verbindlichkeiten

(1)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Verbindlichkeiten,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werden, soweit Absatz 2 nichts anderes bestimmt,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2) Abweichend von Absatz 1 werden folgende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 Verbindlichkeit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gerechnet,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1. Löhne und Gehälter in Höhe der nach dem 1. Mai 1990 geltenden Tarifverträge sowie Stipendi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2. Rent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soweit sich aus Artikel 20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ichts anderes ergibt;
3. Mieten und Pachten sowie sonstige regelmäßig wiederkehrende Zahlungen, die nach dem 30. Juni 1990 fällig werden, mit Ausnahme wiederkehrender Zahlungen aus und in Lebensversicherungen und privaten Rentenversicherungen.

(3) Verbindlichkeiten sind i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aufzunehmen, wenn eine schriftliche Erklärung des Gläubigers vorliegt, daß er

1. Zahlung nur verlangen wird, soweit die Erfüllung aus dem Jahresüberschuß möglich ist, und
2. im Falle der Auflösung, Zahlungsunfähigkeit oder Überschuldung des Unternehmens hinter alle Gläubiger zurücktritt, die eine solche Erklärung nicht abgegeben haben.

Der Gesamtbetrag solcher Verbindlichkeiten ist im Anhang unter den sonstigen finanziellen Verpflichtungen gesondert anzugeben, soweit sie nicht auf Grund einer Vereinbarung mit dem Unternehmen als nachrangiges Kapital ausgewiesen werden.

(4) Verbindlichkeiten, die bis zum 30. Juni 1991 erlassen oder von einem Dritten unentgeltlich übernommen werden, sind nicht zu bilanzieren.

§ 17

Rückstellungen

(1) Ungewisse Verbindlichkeiten, die vor dem 1. Juli 1990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gründet wurden, sind wie Verbindlichkeiten in Deutsche Mark umzurechnen und als Rückstellungen auszuweisen.

(2) Rückstellungen für drohende Verluste aus schwebenden Geschäften nach § 24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sind in der Eröffnungsbilanz neu zu bilden. Sie sind insbesondere einzustellen, wenn zu erwarten ist, daß ein Absatz- oder Beschaffungsgeschäft nach Erfüllung zu einem Aufwand führt, der die Gegenleistung übersteigt, oder zu einer Abschreibung auf den gelieferten Gegenstand führt.

(3) Rückstellungen, die nicht nach Absatz 1 umzurechnen sind, sind in Höhe des Betrags in Deutscher Mark anzusetzen, der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notwendig ist, um die Verpflichtung zu erfüllen.

(4) Werden Rückstellungen wegen der erstmaligen Anwendung des § 24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in der Eröffnungsbilanz gebildet, so ist in Höhe des Betrags dieser Rückstellungen, soweit er nicht durch eine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1 Satz 1 oder § 40 ausgeglichen wird oder soweit nicht ei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r Fehlbetrag auszuweisen ist, auf der Aktivseite ein Sonderverlustkonto aus Rückstellungsbildung gesondert auszuweisen. Der aktivierte Betrag ist in den Folgejahren jeweils in Höhe der Aufwendungen abzuschreiben, die zur Erfüllung der zurückgestellten Verpflichtungen entstehen. In Höhe des Sonderverlustkontos ist innerhalb der Gewinnrücklagen eine Sonderrücklage zu bilden, die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Der aktivierte Betrag ist nicht geeignet, Ausstehende Einlagen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das Kapital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Abs. 1 zu ersetzen.

(5) § 249 Abs. 1 Satz 2 Nr. 1 des Handelsgesetzbuchs braucht nicht angewandt zu werden. § 249 des Handelsgesetzbuchs bleibt im übrigen unberührt. An Stelle eines Wertabschlags nach § 9 Abs. 2 Satz 2 oder § 10 Abs. 1 Satz 2 oder Abs. 2 Satz 2 kann eine Rückstellung nach § 249 Abs. 1 Satz 2 Nr. 1 oder Satz 3 oder Ab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gebildet werden, wenn die Voraussetzungen hierfür erfüllt sind. § 16 Abs. 3 und 4 ist entsprechend anzuwenden.

§ 18

Währungsumrechnung

Auf ausländische Währung lautende Vermögensgegenstände, Schulden und Rechnungsabgrenzungsposten sowie am Bilanzstichtag nicht abgewickelte Kassa-

Geschäfte sind mit dem Kassa-Kurs am Bilanzstichtag in Deutsche Mark umzurechnen. Nicht abgewickelte Termingeschäfte sind zum Terminkurs am Bilanzstichtag umzurechnen. Forderungen und Lieferansprüche sind mit dem Geldkurs, Verbindlichkeiten und Lieferverpflichtungen mit dem Briefkurs umzurechnen.

Unterabschnitt 3

Anhang. Vergleichende Darstellung

§ 19

Anhang

(1) Im Anhang sind die auf die Posten der Eröffnungsbilanz angewandten Bilanzierungs- und Bewertungsmethoden, insbesondere die bei der Neubewertung angewandten, anzugeben und so zu erläutern, daß ein sachverständiger Dritter die Wertansätze beurteilen kann; insbesondere sind bei Schätzungen die Vergleichsmaßstäbe darzustellen. Bei der Ausübung von Wahlrechten sind wesentliche Auswirkungen auf die Vermögenslage gesondert darzustellen. Außerdem sind diejenigen Angaben aufzunehmen, die zu den einzelnen Posten der Eröffnungsbilanz vorgeschrieben oder die im Anhang zu machen sind, weil sie in Ausübung eines Wahlrechts nicht in die Eröffnungsbilanz aufgenommen wurden.

(2) Im Anhang sind die Maßnahmen zu beschreiben, die für die Zeit nach dem 30. Juni 1990 getroffen oder geplant worden sind, um das Unternehmen an die veränderten Bedingungen anzupassen. Dazu gehören insbesondere Änderungen des Unternehmenszwecks, Aufgabe oder Neuaufnahme von Produkten, Stilllegungen, die Aufspaltung oder der Zusammenschluß mit anderen Unternehmen. Die voraussichtlichen Kosten der Umstrukturierung sind anzugeben.

(3) Im Anhang sind ferner anzugeben:

1. zu den in der Bilanz ausgewiesenen Verbindlichkeiten
 - a) der Gesamtbetrag der Verbindlichkeiten mit einer Restlaufzeit von mehr als fünf Jahren,
 - b) der Gesamtbetrag der Verbindlichkeiten, die durch Pfandrechte oder ähnliche Rechte gesichert sind, unter Angabe von Art und Form der Sicherheiten;
2. die Aufgliederung der in Nummer 1 verlangten Angaben für jeden Posten der Verbindlichkeiten nach dem vorgeschriebenen Gliederungsschema, sofern sich diese Angaben nicht aus der Bilanz ergeben;
3. zu dem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Grund und Boden sowie zu den Gebäuden und anderen Bauten sind alle gesetzlichen oder vertraglichen Einschränkungen zu vermerken, die sich auf deren Nutzung, Verfügbarkeit oder Verwertung beziehen. Es sind außerdem alle Sachverhalte anzugeben, aus denen sich künftige finanzielle Verpflichtungen ergeben können, insbesondere für Großreparaturen, Rekultivierungs- oder Entsorgungsaufwendungen;
4. zu den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technischen Anlagen und Maschinen, anderen Anlagen sowie der Betriebs- und Geschäftsausstattung sind deren Zustand (durchschnittliche Abnutzung, technischer Stand) und deren zukünftige Einsatzmöglichkeiten zu beschreiben; der voraussichtliche Investi-

- tionsbedarf in den nächsten vier Jahren ist, soweit vorhersehbar, anzugeben;
5. Ansprüche, die sich gegen das Unternehmen ergeben können, weil die früheren Eigentümer des Unternehmens, von Unternehmensteilen, Betrieben oder von Vermögensgegenständen enteignet worden sind;
 6. der Gesamtbetrag der sonstigen finanziellen Verpflichtungen, die nicht in der Bilanz erscheinen und die auch nicht nach § 251 des Handelsgesetzbuchs oder auf Grund anderer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anzugeben sind, sofern diese Angaben für die Beurteilung der Finanzlage von Bedeutung sind; davon sind Verpflichtungen gegenüber Gesellschaftern gesondert anzugeben;
 7. die Zahl der beschäftigten Arbeitnehmer;
 8. alle Mitglieder des Geschäftsführungsorgans und eines Aufsichtsrats, auch wenn sie nur vorläufig bestellt sind, mit dem Familiennamen und mindestens einem ausgeschriebenen Vornamen. Der Vorsitzende eines Aufsichtsrats, seine Stellvertreter und ein etwaiger Vorsitzender des Geschäftsführungsorgans sind als solche zu bezeichnen;
 9. Name und Sitz anderer Unternehmen, von denen das Unternehmen oder eine für seine Rechnung handelnde Person mindestens den fünften Teil der Anteile besitzt; außerdem sind die Höhe des Anteils am Kapital und das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 Eigenkapital oder ei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r Fehlbetrag dieser Unternehmen anzugeben; auf die Berechnung der Anteile ist § 16 Abs. 2 und 4 des Aktien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10. Rückstellungen, die in der Bilanz unter dem Posten „sonstige Rückstellungen“ nicht gesondert ausgewiesen werden, sind zu erläutern, wenn sie einen nicht unerheblichen Umfang haben. Aufwandrückstellungen sind stets gesondert anzugeben und zu erläutern;
 11. Name und Sitz des unmittelbaren Mutterunternehmens sowie der Ort der Offenlegung der von diesem Mutterunternehmen aufgestellten Konzernöffnungsbilanz.

(4) Die in Absatz 2 und 3 verlangten Angaben und Erläuterungen können unterbleiben, soweit sie

1. für die Darstellung der Vermögenslage des Unternehmens nach § 264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von untergeordneter Bedeutung sind oder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3 Nr. 4 und 9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geeignet sind, dem Unternehmen einen erheblichen Nachteil zuzufügen.

§ 20

Vergleichende Darstellung

Unternehmen, die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haben dem Anhang eine vergleichende Darstellung als Anlage beizufügen, aus der sich ergibt, in welchem Umfang die Posten der Schlußbilanz zum 30. Juni 1990 im Vergleich mit den Posten der D-Mark-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sich verändert haben. Die sich aus der Neubewert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der Schulden ergebenden Differenzen gegenüber der Schlußbilanz sind in einem gesonderten Nach-

weis unter der Bezeichnung Neubewertungsdifferenzen, gegliedert nach den Posten der D-Mark-eröffnungsbilanz, darzustellen. Die Neubewertungsdifferenzen sind durch Einzelnachweise zu dokumentieren.

Abschnitt 2

Konzerneröffnungsbilanz. Gesamteröffnungsbilanz

§ 21

Pflicht zur Aufstellung

(1) Zur Aufstellung einer Eröffnungsbilanz verpflichtete Unternehmen, die die Mehrheit der Anteile an einem anderen Unternehmen (Tochterunternehmen) besitzen (Mutterunternehmen), haben spätestens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für kleine Unternehmen nach § 35 Abs. 1 Satz 3 für den 1. Juli 1990 eine Konzern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sowie einen Anhang gemäß § 22 aufzustellen, der mit der Konzernöffnungsbilanz eine Einheit bildet. Ein Mutterunternehmen ist von der Pflicht zur Aufstellung der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s Anhangs befreit, wenn am Stichtag die Bilanzsummen in den Eröffnungsbilanzen des Mutterunternehmens und der einzubeziehenden Tochterunternehmen nach Abzug von in den Eröffnungsbilanzen auf der Aktivseite ausgewiesenen Fehlbeträgen insgesamt fünfzig Millionen Deutsche Mark nicht überschreiten oder die Konzernunternehmen insgesamt nicht mehr als fünfhundert Arbeitnehmer beschäftigen.

(2)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klar und übersichtlich aufzustellen. Sie haben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des Konzerns im Sinne des § 297 Abs. 2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zu vermitteln. Führen besondere Umstände dazu, daß die Konzernöffnungsbilanz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im Sinne des Satzes 2 nicht vermittelt, so sind im Konzernanhang zusätzliche Angaben zu machen.

(3) In die Konzernöffnungsbilanz sind das Mutterunternehmen und alle Tochterunternehmen ohne Rücksicht auf den Sitz der Tochterunternehmen einzubeziehen, sofern die Einbeziehung nicht nach den §§ 295, 296 des Handelsgesetzbuchs unterbleibt. Ändert sich die Zusammensetzung des Konzerns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so sind diese Änderungen so zu behandeln, als wären sie bereits zum 1. Juli 1990 eingetreten. Dies gilt auch für Unternehmen, die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nach dem 1. Juli 1990 gegründet werden.

(4) Auf die Konzernöffnungsbilanz sind die §§ 5 bis 19 dieses Gesetzes sowie die §§ 295 bis 298, 300, 301, 303, 304, 307, 308, 310 bis 312 des Handelsgesetzbuchs und die für die Rechtsform und den Geschäftszweig der in die Konzernöffnungsbilanz einbezogenen Unternehmen mit Sitz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geltenden Vorschriften mit Ausnahme des § 296 Abs. 1 Nr. 3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sie sich auf die Bilanz großer Kapitalgesellschaften beziehen und die Konzernöffnungsbilanz wegen ihrer Eigenart keine Abweichungen bedingt. Bei der Anwendung des § 308 des Handelsgesetzbuchs kann unterstellt

werden, daß die Eröffnungsbilanzen von Tochter- und Mutterunternehmen mit Sitz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einheitlich bewertet sind.

(5) Die Treuhandanstalt und die von ihr gegründeten Treuhand-Aktiengesellschaften stellen in den erste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für die Konzernöffnungsbilanz nach § 35 Abs. 1 Satz 3 anstatt einer Konzernöffnungsbilanz eine Gesamteröffnungsbilanz in vereinfachter Form und anstatt eines Konzernanhangs einen Gesamtanhang auf. Sie fassen jeweils die Gesamt- oder Konzernöffnungsbilanzen ihrer Tochtergesellschaften zusammen. Bei der Kapitalkonsolidierung nach § 301 des Handelsgesetzbuchs kann unterstellt werden, daß ein nach Verrechnung auf der Aktivseite entstehender Unterschiedsbetrag Geschäfts- oder Firmenwert oder ein auf der Passivseite entstehender Unterschiedsbetrag Eigenkapital ist, soweit er im letzteren Fall nicht auf unterlassene Rückstellungen zurückzuführen ist. § 303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Schuldenkonsolidierung braucht nur auf Geschäfte zwischen den Mutterunternehmen und ihren jeweiligen Tochterunternehmen angewandt zu werden. Auch brauchen Zwischenergebnisse nach § 304 des Handelsgesetzbuchs nur herausgerechnet zu werden, wenn sie auf Lieferungen und Leistungen zwischen den aufstellenden Mutterunternehmen und ihren jeweiligen Tochterunternehmen beruhen. Im übrigen sind auf die Aufstellung, Prüfung, Feststellung und Offenlegung die nach diesem Gesetz für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n Konzernanhang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 295 des Handelsgesetzbuchs ist nicht anzuwenden.

§ 22

Konzernanhang

(1) Auf den Konzernanhang ist § 19 entsprechend anzuwenden. Aus den Anhängen der Tochterunternehmen sind jedoch nur diejenigen Angaben zusammenfassend zu übernehmen, die für die Beurteilung des Konzerns von wesentlicher Bedeutung sind.

(2) Im Konzernanhang sind außerdem die nach § 313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verlangten Angaben zu machen. § 313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ist anzuwenden.

§ 23

Vorlage- und Auskunftspflichten

(1) Jedes Mutterunternehmen kann von seinen Tochterunternehmen alle Aufklärungen und Nachweise verlangen, welche die Aufstellung der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s Konzernanhangs erfordert. Dies gilt auch für Auskünfte, die sich auf andere, dem Mutterunternehmen durch Gesetz übertragene Aufgaben beziehen.

(2) Die Tochterunternehmen haben jedem Mutterunternehmen ihre Eröffnungsbilanz einschließlich Anhang und, wenn sie gleichzeitig Mutterunternehmen sind, ihre Konzernöffnungsbilanz einschließlich Konzernanhang unverzüglich nach deren Aufstellung und die Prüfungsberichte unverzüglich nach deren Eingang einzureichen. Werden die einzureichenden Unterlagen nachträglich geändert, so sind die geänderten Fassungen unverzüglich nach der Änderung einzureichen. Werden die Unterlagen vor ihrer Feststellung eingereicht, ist die Feststellung mitzuteilen, sobald diese erfolgt ist.

Abschnitt 3

Kapitalausstattung

Unterabschnitt 4

Vermögensausgleich und Eigenkapitalsicherung von bisher volkseigenen Unternehmen

§ 24

Ausgleichsforderungen

(1) Unternehmen, die als bisher volkseigenes Vermögen der Treuhandanstalt oder einem ihrer Tochterunternehmen zur Privatisierung oder dem Staat, den Gemeinden, Städten, Kreisen, Ländern oder anderen Vermögensträgern unentgeltlich übertragen wurden und sich am 1. Juli 1990 noch in deren alleinigem Anteilsbesitz befanden, und die nicht Geldinstitute, Außenhandelsbetriebe oder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erhalten,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daß sie eine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n Fehlbetrag ausweisen müßt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eine gesondert auszuweisende verzinsliche Forderung (Ausgleichsforderung) in Höhe des Fehlbetrags, wenn der Schuldner die Ausgleichsforderung nicht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Einreichung der festgestellten Eröffnungsbilanz ablehnt. Er hat sie abzulehnen, wenn das Unternehmen nicht sanierungsfähig ist. Die Ablehnung ist dem Unternehmen schriftlich mitzuteilen. Die Ausgleichsforderung entfällt mit dem Zugang der Ablehnungserklärung.

(2) Die Ausgleichsforderung mindert sich in Höhe des Betrags, um den der Fehlbetrag durch Ausnutzung von Bewertungswahlrechten ausgeglichen werden kann. § 36 bleibt unberührt. Die Ausgleichsforderung ist so zu verzinsen, daß eine Abwertung wegen Minderverzinsung nach § 13 Abs. 3 Satz 2 nicht notwendig wird.

(3) Die Ausgleichsforderung richtet sich gegen das Unternehmen, dem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die Anteilsrechte an dem berechtigten Unternehmen unentgeltlich übertragen worden sind. Sind Unternehmen als ehemals volkseigenes Vermögen dem Staat, den Ländern, Kreisen, Städten, Gemeinden oder anderen Vermögensträgern durch Gesetz übertragen worden, richtet sich die Ausgleichsforderung gegen diese Stellen. Werden der Treuhandanstalt zustehende Anteilsrechte unentgeltlich auf Tochterunternehmen übertragen, so sind diese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Diese können ihrerseits Ausgleichsforderungen nach Absatz 1 gegen die Treuhandanstalt geltend machen, wenn sie ein unmittelbares Tochterunternehmen der Treuhandanstalt sind.

(4) Das Unternehmen hat den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zu unterrichten, sobald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ine solche abzeichnet. Dem Schuldner stehen die Rechte nach § 23 ab 1. Juli 1990 zu. Die Treuhandanstalt unterrichtet unverzüglich den Minister der Finanzen und den Bundesminister der Finanzen über Ausgleichsforderungen, die gegen die Treuhandanstalt gerichtet sind.

(5) Mutterunternehmen, die Schuldner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Absatz 1 sind, stellen in Höhe ihrer Ver-

bindlichkeit aus dieser Ausgleichsforderung auf der Aktivseite ihrer Eröffnungsbilanz ein Beteiligungsentwertungskonto ein, soweit nicht ein nicht durch Eigenkapital gedeckter Fehlbetrag auszuweisen ist. Der aktivierte Betrag ist in den Folgejahren jeweils in Höhe der Tilgung der Ausgleichsforderung abzuschreiben. In Höhe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ist innerhalb der Gewinnrücklagen eine Sonderrücklage zu bilden, die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Der aktivierte Betrag ist nicht geeignet, Ausstehende Einlagen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das Kapitalent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Abs. 1 zu ersetzen.

§ 25

Ausgleichsverbindlichkeiten

(1)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von in § 24 Abs. 1 Satz 1 bezeichneten Unternehmen, daß ein höheres Eigenkapital auszuweisen wäre, als es dem für das Sachanlagevermögen auszuweisenden Betrag, vermindert um den für den zum 1. Juli 1990 übergegangenen Grund und Boden auszuweisenden Betrag, entspricht, so werden sie in Höhe des übersteigenden Betrags mit einer gesondert auszuweisenden Ausgleichsverbindlichkeit belastet. Das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oder seine Tätigkeit gesetzlich vorgeschriebene Mindestkapital darf jedoch nicht unterschritten werden. § 36 bleibt unberührt. Bei der Berechn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en sind Sonderrücklagen nach § 17 Abs. 4 Satz 3, § 24 Abs. 5 Satz 3 und gezeichnetes Kapital, das über Ausstehende Einlagen oder ein Kapitalentwertungskonto nach § 26 Abs. 4, § 28 gebildet wird, nicht zu berücksichtigen.

(2) Gläubiger der Verbindlichkeit ist diejenige Person, die bei Entstehen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3 Schuldner der Ausgleichsforderung wäre. Auf die Verzins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ist § 24 Abs. 2 Satz 3 entsprechend anzuwenden. Der Anteilseigner kann als Gläubiger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ganz oder teilweise erlassen. Der erlassene Betrag ist in der Eröffnungsbilanz des Mutterunternehmens dem Beteiligungsbuchwert nach § 11 Abs. 1 Satz 1 zuzuschreiben.

(3) Das Unternehmen hat den Gläubiger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zu unterrichten, sobald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ine solche abzeichnet. Dem Gläubiger stehen die Rechte nach § 23 ab 1. Juli 1990 zu.

(4) Mutterunternehmen, die Gläubiger einer Ausgleichsverbindlichkeit nach Absatz 1 sind, stellen in Höhe dieses Betrags auf der Aktivseite ihrer Eröffnungsbilanz eine entsprechende Forderung ein. Beträge, die dem Mutterunternehmen zur Tilg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des Tochterunternehmens zufließen, werden mit dieser Forderung jeweils verrechnet.

(5) Sind Beteiligungen oder Grund und Boden auf ein Unternehmen mit Wirkung zum 1. Juli 1990 unentgeltlich übergegangen, so sind sie an die Treuhandanstalt zu übertragen, wenn sich innerhalb der Feststellungsfrist nach § 35 Abs. 1 Satz 3 die Zahlungsunfähigkeit oder die Überschuldung des Unternehmens ergibt und das Unternehmen nicht sanierungsfähig ist oder wenn innerhalb dieser Frist die Auflösung des Unternehmens beschlossen wird. Soweit Gläubiger, deren Ansprüche nach dem 1. Juli 1990 entstanden sind, durch die Übertragung benachteiligt werden, sind sie von der Treuhandanstalt bis zur Höhe des

Verkehrswerts der übertragenen Vermögensgegenstände schadlos zu stellen; im Falle der Eröffnung der Gesamtvollstreckung kann dieser Anspruch nur vom Verwalter geltend gemacht werden.

§ 26

Eigenkapitalsicherung

(1) Unternehmen im Sinne des § 24 Abs. 1 Satz 1 haben als Eigenkapital den Betrag auszuweisen, um den der Gesamtbetrag der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Vermögensgegenstände einschließlich der nach diesem Gesetz einzustellenden Sonderposten und der Rechnungsabgrenzungsposten höher ist als der Gesamtbetrag der auf der Passivseite ausgewiesenen Schulden und der Rechnungsabgrenzung.

(2) Ist dem Unternehmen nach dem für seine Rechtsform maßgeblichen Recht die Bildung eines gezeichneten Kapitals vorgeschrieben, so ist dieses in der in der Satzung oder im Gesellschaftsvertrag vorgesehenen Höhe, zumindest aber in Höhe des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neu festzusetzen. § 27 Abs. 2 Satz 2 und 3, Abs. 3 und 7 ist anzuwenden.

(3) Reicht das nach Absatz 1 ermittelte Eigenkapital abzüglich der Sonderrücklagen nach § 17 Abs. 4 Satz 3, § 24 Abs. 5 Satz 3 und der vorläufigen Gewinnrücklage nach § 31 Abs. 1 Satz 2 zur Bild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nicht aus, so ist der Fehlbetrag als Ausstehende Einlage auf der Aktivseite vor dem Anlagevermögen gesondert auszuweisen. Für die Einzahlung des Kapitals gelten die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maßgeblichen Vorschriften. Ist die Mindesteinzahlung nicht vollständig bewirkt, gilt der Fehlbetrag als eingefordert. Die Forderung entfällt, wenn der Anteilseigner die Auflösung des Unternehmens innerhalb der Fest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beschließt oder innerhalb dieser Frist die Eröffnung der Gesamtvollstreckung beantragt wird. § 24 Abs. 4 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 19 Abs. 4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st nicht anzuwenden.

(4) Hat der Anteilseigner nach Überführung des Unternehmens in eine private Rechtsform seine Einlage bis zum 30. Juni 1990 geleistet, so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ein Fehlbetrag dadurch ausgeglichen werden, daß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an Stelle der Ausstehenden Einlage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28 Abs. 1 und 2 unter den dortigen Voraussetzungen ein Kapitalentwertungskonto ausgewiesen wird. § 30 ist anzuwenden.

Unterabschnitt 5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privater Unternehmen

§ 27

Neufestsetzung

(1) Dieser Unterabschnitt ist auf alle Unternehmen anzuwenden, auf die § 24 nach dessen Absatz 1 Satz 1 nicht anzuwenden ist, auch wenn sie nach § 1 Abs. 5 als zum 1. Juli 1990 gegründet angesehen werden oder auf sie nach § 4 Abs. 3 das gesamte Vermögen eines Unternehmens als zum 1. Juli 1990 übergegangen gilt. Als

Eigenkapital ist der in § 26 Abs. 1 bezeichnete Betrag auszuweisen.

(2) Aktien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haben ihr Grundkapital,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ihr Stammkapital in der in der Satzung oder im Gesellschaftsvertrag vorgesehenen Höhe, zumindest aber in Höhe des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neu festzusetzen. Das gezeichnete Kapital kann mit einem höheren Betrag festgesetzt werden,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nach Abzug der Rücklage nach § 31 ein höheres Eigenkapital ergibt. Der übersteigende Betrag ist bei Aktien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der gesetzlichen Rücklage, bei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einer Sonderrücklage zuzuweisen, die nur zum Ausgleich von Verlusten verwendet werden darf.

(3) Die Gesellschafter dürfen auf Grund der Neufestsetzung keine Zahlungen erhalten und von der Verpflichtung zur Leistung von Einlagen nicht befreit werden; § 57 Abs. 1 Satz 1, § 62 des Aktiengesetzes, § 30 Abs. 1, § 31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sind auf die in der Eröffnungsbilanz gebildeten Rücklagen entsprechend anzuwenden.

(4) Offene Handels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haben die Kapitaleinlagen ihrer Gesellschafter, soweit solche im Gesellschaftsvertrag vereinbart sind, und Kommanditgesellschaften zusätzlich die Hafteinlagen ihrer Kommanditisten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Absatzes 2 und 3 neu festzusetzen. Das Entnahmerecht der Gesellschafter nach § 122 des Handelsgesetzbuchs darf nicht dazu führen, daß das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 Eigenkapital niedriger wird als die Summe der auf der Aktivseite ausgewiesenen Beträge nach § 31. Persönlich haftende Gesellschafter haben zuviel entnommene Beträge zurückzuerstatten. Führen Zahlungen an Kommanditisten zu einer solchen Minderung des Eigenkapitals, gelten diese als Rückzahlung der Einlage nach § 172 Abs. 4 des Handelsgesetzbuchs.

(5) Genossenschaften haben die Geschäftsguthaben, die Geschäftsanteile und die Haftsummen neu festzusetzen; Absatz 2 Satz 2 und 3 und Ab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6) Bei der Neufestsetzung können die Anteile auf die folgenden Beträge gestellt werden:

1. Aktien auf einen Nennbetrag von fünfzig Deutsche Mark oder auf höhere Nennbeträge, die auf volle hundert Deutsche Mark lauten,
2. die Geschäftsanteile a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auf fünfhundert Deutsche Mark oder jeden höheren Betrag, der durch hundert teilbar ist, und zwar unabhängig von der Zahl der Gesellschafter,
3. die Geschäftsanteile bei Genossenschaften auf fünfzig Deutsche Mark oder auf jeden höheren auf volle fünfzig Deutsche Mark lautenden Betrag.

(7) In der Eröffnungsbilanz sind das gezeichnete Kapital und die Rücklagen in der Höhe auszuweisen, wie sie nach der Neufestsetzung bestehen sollen.

(8) Absatz 2 bis 7 ist auf ein Unternehmen in einer Rechtsform nach § 1 Abs. 2 Nr. 1 bis 7 jeweils entsprechend anzuwenden, wenn es nach dem für seine Rechtsform maßgeblichen Recht zwischen einem gezeichneten

Kapital und Rücklagen unterscheidet; dabei ist jeweils die Regelung für diejenige Rechtsform anzuwenden, die der des Unternehmens am nächsten kommt.

§ 28

Vorläufige Neufestsetzung

(1) An Stelle einer endgültigen Neufestsetzung nach § 27 kann von Unternehmen, d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die Neufestsetzung vorläufig in der Weise durchgeführt werden, daß das in der Schlußbilanz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sgewiesene gezeichnete Kapital (Grundkapital, Stammkapital, Einlagen, Genußrechtskapital, Geschäftsguthaben) mit dem gleichen Betrag in Deutscher Mark in die Eröffnungsbilanz übernommen und der Unterschied, um den der Betrag des gezeichneten Kapitals das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mittelte Eigenkapital übersteigt, als Kapitalentwertungskonto auf der Aktivseite der Eröffnungsbilanz eingestellt wird.

(2) Der Betrag, der als Kapitalentwertungskonto ausgewiesen wird, darf nicht höher sein als neun Zehntel des gezeichneten Kapitals. Eine Kapitalrücklage darf nicht beibehalten werden. Eine Gewinnrücklage darf beibehalten werden, soweit diese nach § 31 gebildet worden ist und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erwartet werden kann, daß das Unternehmen das Kapitalentwertungskonto aus künftigen Jahresüberschüssen tilgen kann. Das Unternehmen ist verpflichtet, das Kapitalentwertungskonto innerhalb von fünf Geschäftsjahren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auszugleichen. Zur Tilgung sind Werterhöhungen auf Grund der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nach § 36 sowie die Jahresüberschüsse zu verwenden. Eine anderweitige Verwendung ist unzulässig, solange das Kapitalentwertungskonto besteht.

§ 29

Gesellschaftsrechtliche Beziehungen

(1) Das Verhältnis der mit den Anteilen verbundenen Rechte zueinander wird durch die Neufestsetzung nicht berührt.

(2) Vertragliche Beziehungen des Unternehmens zu Dritten, die von der Gewinnausschüttung des Unternehmens, dem Nennbetrag oder dem Wert ihrer Anteile oder ihres gezeichneten Kapitals oder in sonstiger Weise von den bisherigen Kapital- oder Gewinnverhältnissen abhängen, bestimmen sich nach den durch die Neufestsetzung eingetretenen neuen Kapital- oder Gewinnverhältnissen. Dritte brauchen eine durch die Neufestsetzung eintretende Kürzung ihrer Rechte nach Satz 1 nicht gegen sich gelten zu lassen, soweit sie darauf beruht, daß in der Eröffnungsbilanz das gezeichnete Kapital zu den Rücklagen in einem durch §§ 27, 28 nicht bedingten ungünstigeren Verhältnis steht, als dies in der Schlußbilanz der Fall ist.

(3) Wird während des Bestehens eines Kapitalentwertungskontos eine Kapitalerhöhung beschlossen, so ist jedem Anteilseigner auf sein Verlangen ein seinem Anteil an dem bisherigen gezeichneten Kapital entsprechender Teil der neuen Anteile zuzuteilen, es sei denn, daß ein Dritter die Anteile übernommen und sich verpflichtet hat, sie den Anteilseignern zum Bezug anzubieten.

§ 30

Auflösung von Kapitalentwertungskonten

(1) Wird ein Kapitalentwertungskonto nicht innerhalb der in § 28 Abs. 2 Satz 4 bestimmten Frist ausgeglichen, so hat das für Kapitalmaßnahmen zuständige Organ des Unternehmens spätestens bei der Beschlußfassung über die Verwendung des Ergebnisses aus dem Jahresabschluß des fünften Geschäftsjahrs nach de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die Maßnahmen zu beschließen, die erforderlich sind, um das Kapitalentwertungskonto auf andere Weise als durch Tilgung, insbesondere durch Ermäßig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auszugleichen.

(2) Die Maßnahmen gemäß Absatz 1 sind unverzüglich durchzuführen. Ihre Durchführung gilt als endgültige Neu- festsetzung. Auf die Ermäßig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sind die für die Rechtsform des Unternehmens maßgeblichen Vorschriften, von Aktiengesellschaften und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die §§ 229 bis 236 des Aktiengesetzes über die vereinfachte Kapitalherabsetzung anzuwenden.

Unterabschnitt 6

Vorläufige Gewinnrücklage

§ 31

Vorläufige Gewinnrücklage

(1) Unternehmen dürfen, wenn s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folgende Maßnahmen treffen, um eine Gewinnrücklage bilden zu können:

1. Die nicht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des Anlagevermögens dürfen mit dem Betrag angesetzt werden, den ein Erwerber des Unternehmens bei dessen Fortführung im Rahmen des Gesamtkaufpreises für diese Vermögensgegenstände ansetzen würde. Ein Geschäfts- oder Firmenwert darf berücksichtigt werden.
2. Die Aufwendungen für die Ingangsetzung und Erweiterung des Geschäftsbetriebs nach § 269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dürfen aktiviert werden. Dazu gehören alle Maßnahmen, die nach dem 1. März 1990 ergriffen wurden und geeignet sind, die Wettbewerbsfähigkeit des Unternehmens herzustellen.
3. Zuschüsse, Beihilfen und andere Vermögensvorteile, die ohne Rückzahlungsverpflichtung von Dritten für Investitionen gewährt werden, dürfen aktiviert werden, sofern der Auftrag für die Investition bis zum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verbindlich erteilt worden ist.

In Höhe der nach Satz 1 Nr. 1 bis 3 aktivierten Beträge ist auf der Passivseite eine Gewinnrücklage zu bilden, die bis zur Tilgung der aktivierten Beträge als vorläufige zu bezeichnen ist.

(2) Der nach Absatz 1 Nr. 1 angesetzte Betrag ist planmäßig innerhalb der Zeit abzuschreiben, die der durchschnittlichen Restnutzungsdauer der nach § 7 neu bewerteten entgeltlich erworbenen immateriellen Vermögensgegenstände des Unternehmens entspricht. Fehlen Vergleichszahlen oder sind die Verhältnisse nicht vergleichbar, so ist der Betrag in jedem folgenden Geschäftsjahr zu mindestens einem Viertel durch Abschreibung zu tilgen.

(3) Für die Ingangsetzung und Erweiterung des Geschäftsbetriebs nach Absatz 1 Nr. 2 ausgewiesene Beträge sind in jedem folgenden Geschäftsjahr zu mindestens einem Viertel durch Abschreibung zu tilgen.

(4) Die nach Absatz 1 Nr. 3 aktivierten Beträge sind in den Folgejahren erfolgsneutral umzubuchen, sobald deren Bilanzierungsfähigkeit eingetreten ist. Entfällt der Anspruch nach Absatz 1 Nr. 3 nachträglich, so ist der hierfür angesetzte Betrag unmittelbar mit den Rücklagen zu verrechnen.

(5) Von Absatz 1 Nr. 1 und 2 darf nur insoweit Gebrauch gemacht werden, als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angenommen werden kann, daß das Unternehmen in der Lage sein wird, die sich hieraus ergebenden Aufwendungen und eine Gewinnausschüttung in Höhe der Zinserträge aus ein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us den laufenden Erträgen ohne Beeinträchtigung des in der Eröffnungsbilanz ausgewiesenen Eigenkapitals zu decken.

(6) Werden Beträge nach Absatz 1 Nr. 1 oder 2 aktiviert, so dürfen bis zu deren Tilgung durch Abschreibung Gewinne nur ausgeschüttet werden, wenn die nach der Ausschüttung verbleibenden jederzeit auflösbaren Gewinnrücklagen zuzüglich eines Gewinnvortrags und abzüglich eines Verlustvortrags dem angesetzten Betrag mindestens entsprechen. Entstehende Verluste sind in Höhe der Abschreibungen nach Absatz 2 und 3 mit der Gewinnrücklage zu verrechnen. § 36 bleibt unberührt.

(7) Beträge nach Absatz 1 sind bei der Berechn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und Ausgleichsverbindlichkeiten nach den §§ 24, 25,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und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 28 Abs. 1 nicht zu berücksichtigen.

(8) Nach Absatz 1 aktivierte Beträge und die in Höhe dieser Beträge gebildete Gewinnrücklage sind gesondert unter entsprechender Bezeichnung auszuweisen und im Anhang zu erläutern.

Abschnitt 4**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 32

Festsetzung und Anpassung von Leistungen in Deutscher Mark

(1) Verweisen Verträge, die erst nach dem 30. Juni 1990 zu erfüllen sind, auf Preise, die bisher nach staatlichen Preisvorschriften festgesetzt wurden, aber einer Preisbindung nicht mehr unterliegen, so ist der Preis, wenn eine Preisfestsetzung bis zum 30. Juni 1990 nicht stattgefunden hat, von dem Gläubiger durch Erklärung gegenüber dem zur Zahlung Verpflichteten zu bestimmen. Die getroffene Bestimmung ist für den anderen Teil jedoch nur verbindlich, wenn sie der Billigkeit entspricht. Entspricht sie nicht der Billigkeit, wird die Bestimmung durch Urteil getroffen; das gleiche gilt, wenn die Bestimmung verzögert wird.

(2) Führt die Umrechnung von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schwebenden Verträgen, insbesondere aus Dauerschuld-

verhältnissen dazu, daß das ursprüngliche Gleichgewicht von Leistung und Gegenleistung erheblich verschoben wird und droht dadurch einem Vertragspartner oder beiden Vertragspartnern ein nicht zumutbarer Nachteil, so kann jeder Vertragspartner verlangen, daß der andere Vertragspartner seine Leistung nach billigem Ermessen neu festsetzt. Die getroffene Bestimmung ist für den benachteiligten Vertragspartner nur verbindlich, wenn sie der Billigkeit entspricht. Entspricht sie nicht der Billigkeit, so wird die Bestimmung durch Urteil getroffen; das gleiche gilt, wenn die Bestimmung verzögert wird.

(3) Erfolg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und 2 die Neubestimmung nach billigem Ermessen innerhalb der Aufstellungsfrist für die Eröffnungsbilanz, so ist eine Rückstellung nach § 17 Abs. 2 nur zu bilden, wenn zu erwarten ist, daß auch das neu festgesetzte Entgelt zu einem Verlust führen wird.

Abschnitt 5 Verfahren

Unterabschnitt 7

Prüfung

§ 33

Prüfung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jedoch ohne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sind durch einen Prüfer zu prüfen. Hat keine Prüfung stattgefunden, so kan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festgestellt werden. Kapitalgesellschaften und Genossenschaften, deren Bilanzsumme in der Eröffnungsbilanz drei Millionen neu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nicht übersteigt oder die am Stichtag nicht mehr als fünfzig Arbeitnehmer beschäftigen, brauch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nicht prüfen zu lassen, soweit s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oder Rechtsnachfolger eines prüfungspflichtigen Unternehmens nach § 1 Abs. 5 oder § 4 Abs. 3 sind. Einzelkaufleute und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brauchen die Eröffnungsbilanz nicht prüfen zu lassen, soweit sie nicht Geldinstitute sind.

(2) Ist das Unternehmen in der Zeit vom 1. März 1990 bis zum 30. Juni 1991 gegründet ode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Beschlusses in eine private Rechtsform umgewandelt worden, so kann in die Prüfung der Eröffnungsbilanz auch die Prüfung der Gründung oder Umwandlung einbezogen werden. Dies gilt auch für die Prüfung von Sacheinlagen.

(3)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sind durch einen Prüfer zu prüfen. Hat keine Prüfung stattgefunden, so kann die Konzernöffnungsbilanz nicht festgestellt werden.

(4) Werden die geprüften Unterlagen nach Vorlage des Prüfungsberichts geändert, so hat der Prüfer diese Unterlagen erneut zu prüfen, soweit es die Änderung erfordert. Über das Ergebnis der Prüfung ist zu berichten; der Bestätigungsvermerk ist entsprechend zu ergänzen.

(5) § 317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Gegenstand und Umfang der Prüfung ist mit der Maßgabe anzuwen-

den, daß auch das Inventar in die Prüfung einzubeziehen ist. Bei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ist außerdem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zu prüfen.

(6) Unbeschadet der Regelung in Absatz 1 Satz 3 brauchen Genossenschaften jeder Art einschließlich kooperativer Einrichtungen, die nach dem für sie maßgeblichen Recht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ufzulösen sind, wenn sie nicht umgewandelt werden, und die in ihrer Eröffnungsbilanz eine Bilanzsumme von nicht mehr als einhundertfünfzig Millionen Deutsche Mark ausweisen oder am Bilanzstichtag nicht mehr als fünftausend Arbeitnehmer beschäftigen und die nicht Geldinstitute oder Außenhandelsbetriebe sind, die Eröffnungsbilanz nicht prüfen zu lassen, wenn sie die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d des Anhangs auf eine Person übertragen haben, die als Wirtschaftsprüfer oder vereidigter Buchprüfer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öffentlich bestellt oder als Prüfungsgesellschaft anerkannt oder als Steuerberater oder als Steuerbevollmächtigter nach dem Steuerberatungsgesetz bestellt oder als Steuerberatungsgesellschaft anerkannt worden ist oder als Vereinigung zur Führung der Bezeichnung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 befugt oder Fachanwalt für Steuerrecht ist. Die Pflicht zur Prüfung entfällt jedoch nur, wenn die aufstellende Person schriftlich erklärt, daß

1. die Eröffnungsbilanz auf einer ordnungsgemäßen Inventur beruht oder die Inventur nach § 3 a nachgeholt worden ist und
2.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von ihr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so aufgestellt worden ist, daß diese Unterlagen ein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entsprechendes Bild der Vermögenslage im Sinne des § 264 Abs. 2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vermitteln.

Der Eröffnungsbilanz ist die Erklärung nach Satz 2 und eine Erklärung der Geschäftsführung beizufügen, aus der sich ergibt, daß sie der aufstellenden Person alle Unterlagen vorgelegt und alle Auskünfte erteilt hat, die für die Aufstellung erforderlich waren. § 323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Haftung bei Fahrlässigkeit ist entsprechend anzuwenden. Satz 1 bis 3 ist entsprechend auf die in § 34 Abs. 2 bezeichneten Prüfungsverbände anzuwenden.

§ 34

Durchführung der Prüfung

(1) Prüfer können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tellte und vereidigte Wirtschaftsprüfer und anerkannte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sei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eren Bilanzsumme in der Eröffnungsbilanz fünfzehn Millionen fünf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ach Abzug eines Fehlbetrags nach § 268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nicht übersteigt oder die am Stichtag der Eröffnungsbilanz nicht mehr als zweihundertfünfzig Arbeitnehmer beschäftigen, können ihre Eröffnungsbilanz auch von nach der Wirtschaftsprüfer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tellten vereidigten Buchprüfern oder anerkannten Buchprüfungsgesellschaften prüfen lassen.

(2) Ist das Unternehmen eine Genossenschaft, so sind unter den folgenden Voraussetzungen die nach § 33 vorgeschriebenen Prüfungen statt von den in Absatz 1 Satz 1

bezeichneten Personen von einem Prüfungsverband durchzuführen, dem das Prüfungsrecht nach § 6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 verliehen worden ist. Der Prüfungsverband ist nur prüfungsberechtigt, sofern mehr als die Hälfte der Mitglieder seines Vorstands Wirtschaftsprüfer nach Absatz 1 Satz 1 ist. Hat der Prüfungsverband nur zwei Vorstandsmitglieder, so muß einer von ihnen Wirtschaftsprüfer nach Absatz 1 Satz 1 sein. Hat der Verband, dem die Genossenschaft als Mitglied angehört, eine Vereinbar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Prüfungen mit einem Prüfungsverba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bgeschlossen, so ist dieser zuständig. § 55 Abs. 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bleibt unberührt.

(3) Ist das Unternehmen eine Sparkasse, so dürfen die nach § 33 vorgeschriebenen Prüfungen abweichend von § 319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nur von der Prüfungsstelle eines Sparkassen- und Giroverbands durchgeführt werden. Die Prüfung darf von der Prüfungsstelle jedoch nur durchgeführt werden, wenn der Leiter der Prüfungsstelle die Voraussetzungen des § 319 des Handelsgesetzbuchs erfüllt. Außerdem muß sichergestellt sein, daß der Prüfer die Prüfung unabhängig von den Weisungen der Organe des Sparkassen- und Giroverbands durchführen kann.

(4) Auf die Bestellung des Prüfers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ist § 318 des Handelsgesetzbuchs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as geschäftsführende Organ des Unternehmens den Prüfer vorläufig bestellen kann, insbesondere um seine Anwesenheit bei der Inventur zu erreichen. Die Bestätigung der nach § 318 des Handelsgesetzbuchs zur Wahl des Prüfers berufenen Personen ist unverzüglich nachzuholen.

(5) Auf die Prüfung sind die §§ 317, 318, 319 Abs. 2, 3, §§ 320 bis 323 des Handelsgesetzbuchs entsprechend anzuwenden.

Unterabschnitt 8

Feststellung und Berichtigung

§ 35

Feststellung

(1)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owie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bedürfen der Feststellung. Die für die Aufstellung dieser Unterlag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ch bei der Feststellung anzuwenden. Die Feststellung ist bei Einzelunternehmen vom Inhaber, bei anderen Unternehmen von den Anteilseignern oder dem sonst zuständigen Organ in der für Beschlußfassungen nach der Rechtsform des Unternehmens vorgeschriebenen Form unverzüglich nach Vorlage der Unterlagen herbeizuführ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zwölften Monats und von kleinen Unternehmen nach § 4 Abs. 1 Satz 2 spätestens vor Ablauf des fünfzehn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spätestens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nach § 21 Abs. 1 Satz 1 festzustellen. Die Gesamteröffnungsbilanz und der Gesamtanhang sind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Ablauf der Aufstellungsfrist nach § 21 Abs. 5 festzustellen.

Das Geschäftsführungsorgan hat zu diesem Zweck die festzustellenden Unterlagen unverzüglich nach ihrer Aufstellung und den Prüfungsbericht unverzüglich nach seiner Vorlage dem zur Feststellung berufenen Organ vorzulegen. Hat das Unternehmen einen Aufsichtsrat, so hat der Aufsichtsrat die Unterlagen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171 des Aktiengesetzes zu prüfen und über das Ergebnis der Prüfung schriftlich zu berichten.

(2) Die in Absatz 1 Satz 1 bezeichneten Unterlagen können nicht festgestellt werden, wenn der Bestätigungsvermerk versagt worden ist. Die Eröffnungsbilanz oder die Konzernöffnungsbilanz ist nichtig, wenn sie bei bestehender Prüfungspflicht nicht in der vorgeschriebenen Form geprüft oder nicht festgestellt worden ist. Werden die Unterlagen nach Prüfung geändert, so wird ein Beschluß über die Feststellung erst wirksam, wenn auf Grund der erneuten Prüfung ein hinsichtlich der Änderungen uneingeschränkter Bestätigungsvermerk erteilt worden ist.

(3) Das Geschäftsführungsorgan hat dem Feststellungsorgan sogleich mit den festzustellenden Unterlagen einen Bericht vorzulegen, in dem die Vorschläge zur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und die wesentlichen Umstände darzulegen sind, die für die Bewertung der Vermögensgegenstände und für die Vorschläge zur Neufestsetzung maßgebend gewesen sind, soweit sich diese Erläuterungen nicht aus dem Anhang oder dem Konzernanhang ergeben.

(4) Wird die Eröffnungs- oder Konzernöffnungsbilanz vor Ablauf einer Frist festgestellt, die die Berücksichtigung von Bilanz- oder Wertansätzen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vorschreibt oder zuläßt, so ist eine sofortige Änderung nicht erforderlich. Die sich ergebenden Berichtigungen können nachträglich im Rahmen der Aufstellung des nächstfolgenden Abschlusses nach § 36 berücksichtigt werden.

§ 36

Berichtigung von Wertansätzen

(1)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späterer Jahresabschlüsse, daß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onderposten in der Eröffnungsbilanz nicht oder mit einem zu niedrigen Wert oder Schulden oder Sonderposten zu Unrecht oder mit einem zu hohen Wert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in der späteren Bilanz der unterlassene Ansatz nachzuholen oder der Wertansatz zu berichtigen, wenn es sich um einen wesentlichen Betrag handelt. Der Gewinn ist in Gewinnrücklagen, bei Aktiengesellschaften vorweg in die gesetzliche Rücklage bis zu deren vorgeschriebenen Höhe, einzustellen, soweit er nicht mit einem Verlust aus einer Verminderung des Sonderverlustkontos aus Rückstellungsbildung nach § 17 Abs. 4 oder d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1 oder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nach § 24 Abs. 5 oder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oder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 28 Abs. 1 oder einem Verlust aus der Erhöhung der Ausgleichverbindlichkeiten nach § 25 Abs. 1 zu verrechnen ist.

(2) Ergibt sich bei der Aufstellung späterer Jahresabschlüsse, daß Vermögensgegenstände oder Sonderposten in der Eröffnungsbilanz zu Unrecht oder mit einem zu hohen Wert oder Schulden oder Sonderposten nicht oder mit einem zu geringen Wert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in der späteren Bilanz der Wertansatz zu berichtigen

oder der unterlassene Ansatz nachzuholen, wenn es sich um einen wesentlichen Betrag handelt. Der Verlust ist offen mit dem Eigenkapital, vorweg mit dem Jahresergebnis und den Gewinnrücklagen, zu verrechnen, soweit er nicht mit dem Gewinn aus einer Erhöhung des Sonderverlustkontos aus Rückstellungsbildung nach § 17 Abs. 4 oder der Ausgleichsforderung nach § 24 Abs. 1 oder des Beteiligungsentwertungskontos nach § 24 Abs. 5 oder der Ausstehenden Einlage nach § 26 Abs. 3 oder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 28 Abs. 1 oder dem Gewinn aus einer Verminder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nach § 25 Abs. 1 zu verrechnen ist.

(3) Absatz 1 und 2 ist auch anzuwenden, wenn ein für die Eröffnungsbilanz eingeräumtes Wahlrecht nachträglich mit Wirkung für diese abweichend ausgeübt wird. Gewinne nach Absatz 1 können mit Verlusten nach Absatz 2 nur innerhalb des Eigenkapitals verrechnet werden. Absatz 1 ist auch anzuwenden, wenn zum Zwecke der Sanierung nach Ablauf der Feststellungsfrist eine in der Eröffnungsbilanz berücksichtigte Schuld erlassen, von einem Dritten mit befreiender Wirkung unentgeltlich übernommen oder in eine nachrangige Schuld nach § 16 Abs. 3 oder § 17 Abs. 5 Satz 4 umgewandelt wird.

(4)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bis 3 gilt die Eröffnungsbilanz als geändert. Absatz 1 bis 3 ist letztmals auf Jahresabschlüsse für Geschäftsjahre anzuwenden, die im Jahre 1994 end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nach den §§ 24, 25 und 26 Abs. 3 können nicht mehr geändert werden, soweit sie im Zeitpunkt der Berichtigung getilgt oder auf eine dritte Person übergegangen sind oder Sicherungsrechte dritter Personen dadurch beeinträchtigt werden oder die Anteile an dem Unternehmen auf eine andere Person übertragen worden sind.

(5) Absatz 1 bis 4 ist auf die Konzernöffnungsbilanz entsprechend anzuwenden.

Unterabschnitt 9

Offenlegung

§ 37

Offenlegung

(1) Unternehmen habe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n Anhang sowie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n Konzernanhang innerhalb eines Monats nach Ablauf der jeweiligen Feststellungsfrist offenzulegen, wenn sie nach ihrer Rechtsform oder wegen ihres Geschäftszweigs zur Offenlegung ihrer Jahresabschlüsse verpflichtet sind oder wenn sie in ihrer Eröffnungsbilanz oder in ihrer Konzernöffnungsbilanz eine Bilanzsumme von mehr als einhundertfünfundzwanzig Millionen Deutsche Mark ausweisen und am Bilanzstichtag mehr als fünftausend Arbeitnehmer beschäftigen. Die §§ 325, 326, 328 und 339 des Handelsgesetzbuch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auf die Bestimmung der Größenmerkmale ist § 5 Abs. 2 anzuwenden. Die vergleichende Darstellung nach § 20 braucht nicht offengelegt zu werden. § 4 des Gesetzes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Juni 1990 (GBl. I Nr. 34 S. 357) ist nicht anzuwenden.

(2) Das Registergericht prüft bei der Einreichung der Unterlagen, ob die Unterlagen vollständig sind und, sofern

vorgeschrieben, fristgerecht bekanntgemacht worden sind.

(3) Ist die Prüfung der Gründung, Umwandlung oder von Sacheinlagen in die Prüfung der Eröffnungsbilanz einbezogen worden, so kann das Gericht unterstellen, daß die Wertansätze für Vermögensgegenstände in der Eröffnungsbilanz deren tatsächlichem Wert entsprechen, wenn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einen uneingeschränkten Bestätigungsvermerk erhalten haben.

(4) Unternehmen, die nach den bis zum 30. Juni 1990 gültigen Rechtsvorschriften gegenüber dem Statistischen Am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ichtspflichtig waren, haben die D-Markeröffnungsbilanz unverzüglich nach ihrer Feststellung der Treuhandanstalt in zweifacher Ausfertigung einzureichen.

Abschnitt 6

Geschäftszweigbezogene Vorschriften

Unterabschnitt 10

Vorschriften

fü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 38

Anwendungsbereich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beachten, soweit in diesem Unterabschnit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e dürfen die in diesem Gesetz größenabhängig zugelassenen Erleichterungen nicht in Anspruch nehmen. § 19 Abs. 3 Nr. 1 Buchstabe a dieses Gesetzes und die §§ 25a bis 26b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sind auf Geldinstitute nicht anzuwenden. § 1 Abs. 5 Satz 2 und 3, § 4 Abs. 3 Satz 3 sind auf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nicht anzuwenden.

(2) Geldinstitute sind Unternehmen, die vor dem 1.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fugt Bankgeschäfte gemäß § 1 Abs.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betrieben haben; die Befugnis kann auf Gesetz, Verordnung, behördlicher Anordnung oder behördlicher Erlaubnis beruhen.

(3) Außenhandelsbetriebe sind Unternehmen, die vor dem 1. Juli 1990 im Währungsgebiet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Auftrag staatlicher Stellen im Rahmen des Außenhandels- und Valutamonopols Geschäfte mit Unternehmen oder Ländern außerhalb des Währungsgebiets der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ieben haben. Dazu rechnen auch Unternehmen, die den Geschäftsbetrieb von Außenhandelsbetrieben ganz oder teilweise zum Zwecke der Abwicklung übernommen haben, hinsichtlich des abzuwickelnden Vermögens.

(4) Die Eröffnungsbilanz und der Anhang der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ach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festzustellen. Bis zu diesem Zeitpunkt können Maßnahmen nach § 1 Abs. 5 Satz 1 oder § 4 Abs. 3 Satz 1 und 2 berücksichtigt werden.

§ 39

Eröffnungsbilanz

(1) Geldinstitute haben abweichend von § 247 Abs. 1, §§ 251, 265 Abs. 5 bis 7, §§ 266 bis 268 des Handelsgesetzbuchs und unbeschadet einer weiteren Gliederung die Eröffnungsbilanz gemäß der Verordnung über Formblätter für die Gliederung des Jahresabschlusses von Kreditinstitut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4. September 1987 (BGBl. I S. 2169) aufzustellen, und zwar

1. Geldinstitute, die Kapitalgesellschaft sind, nach dem Muster 1 dieser Verordnung für die Bilanz,
2. Geldinstitute, die eingetragene Genossenschaft sind, nach dem Muster 2 dieser Verordnung für die Bilanz,
3. Geldinstitute, die Sparkasse sind, und andere Geldinstitute des öffentlichen Rechts nach Mustern, die durch Änderung dieser Verordnung festgelegt werden.

(2) Geldinstitute haben in der Eröffnungsbilanz Pauschalwertberichtigungen nach § 13 Abs. 3 auf Forderungen aus Bankgeschäften in Höhe von 1 vom Hundert und auf Eventualforderungen des Bankgeschäfts aus Bürgschaften und sonstigen Gewährleistungen in Höhe von 0,5 vom Hundert vom Gesamtbetrag der Forderungen an Kunden abzusetzen, soweit diese sich nicht gegen eine Gebietskörperschaft, eine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eine Anstalt oder ein Geldinstitut im Währungsgebiet der Deutschen Mark richten oder von ihnen verbürgt sind.

(3) Die Beibehaltung der Pauschalwertberichtigung in künftigen Bilanzen richtet sich nach den allgemeinen Bewertungsgrundsätzen.

(4) Abweichend von § 16 Abs. 1 sind die nachstehend bezeichneten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Verbindlichkeiten der Geldinstitute, die vor dem 1. Juli 1990 begründet wurden, mit der Wirkung auf Deutsche Mark umzurechnen, daß für eine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anzusetzen ist: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natürlichen Personen mit Wohnsitz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die nach dem 1. Juli 1976 geboren sind, bis zu zweitausend Mark,
- die zwischen dem 2. Juli 1931 und dem 1. Juli 1976 geboren sind, bis zu viertausend Mark,
- die vor dem 2. Juli 1931 geboren sind, bis zu sechstausend Mark,

sofern sie einen entsprechenden Antrag gestellt haben. Ferner sind die nach dem 31. Dezember 1989 begründeten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natürlichen oder juristischen Personen oder Stellen, deren Wohnsitz sich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findet, in der Weise umzustellen, daß für dr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Deutsche Mark gutgeschrieben wird, sofern diese Personen oder Stellen einen entsprechenden Antrag gestellt haben.

§ 40

Ausgleichsforderungen

(1) Geldinstituten und Außenhandelsbetrieben wird, soweit ihre Vermögenswerte in Anwendung der Bewer-

tungsvorschriften des Unterabschnitts 2 dieses Gesetzes zur Deckung der aus der Einführung der Währung der Deutschen Mark und der Währungsumstell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vorgehenden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der Rückstellungen nicht ausreichen, beginnend mit dem 1. Juli 1990 eine verzinsliche Forderung gege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zugeteilt.

(2) Für Geldinstitute ist die Forderung in der Höhe anzusetzen, daß die Vermögenswerte ausreichen, um die in Absatz 1 genannten Schulden zu decken und ein Eigenkapital in der Höhe auszuweisen, daß es mindestens vier vom Hundert der Bilanzsumme und die Auslastung des gemäß § 10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vo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erlassenen Grundsatzes I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9. Dezember 1985 (Bundesanzeiger Nr. 239 vom 24. Dezember 1985 S. 15302) höchstens das Dreizehnfache beträgt.

(3) Für Außenhandelsbetriebe ist die Ausgleichsforderung in der Höhe anzusetzen, daß die Vermögenswerte ausreichen, um die in Absatz 1 bezeichneten Schulden zu decken.

(4) § 36 ist mit der Maßgabe entsprechend anzuwenden, daß es nicht auf die Wesentlichkeit ankommt. § 36 Abs. 4 Satz 3 ist nicht anzuwenden.

§ 41

Ausgleichsverbindlichkeiten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haben in ihre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usgleichsverbindlichkeiten) in der Höhe einzustellen, in der bei Geldinstituten das Eigenkapital die in § 40 Abs. 2 genannten Grenzen und bei Außenhandelsbetrieben die Vermögenswerte die Schulden übersteigen.

(2) § 40 Abs. 4 ist entsprechend anzuwenden.

§ 42

Vergleichende Darstellung

Geldinstitute haben in der vergleichenden Darstellung nach § 20 außerdem anzugeben,

1. für welche Forderungen über zehntausend Deutsche Mark sie zum Stichtag 1. Juli 1990 Einzelwertberichtigungen gebildet oder Abschreibungen vorgenommen haben; die abgesetzten Beträge sind anzugeben und zu begründen;
2. die Anzahl der Konten, auf denen Guthab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a) bis zu zwei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
 - b) bis zu vier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
 - c) bis zu sechstausend Deutsche Mark im Verhältnis eins zu eins
 gutgeschrieben wurden;
3. den Gesamtbetrag der Guthaben i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die ein Umstellungsantrag noch gestellt werden kann.

§ 43

Prüfung

(1) Geldinstitute und Außenhandelsbetriebe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oder des öffentlichen Rechts können abweichend von § 34 Abs. 1 nur von einem Wirtschaftsprüfer oder eine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geprüft werden, soweit sie nicht Sparkassen sind.

(2) Die Prüfung erstreckt sich auch auf die Frage, ob bei der nachträglichen Umstellung von Kontoguthaben natürlicher Personen die Voraussetzungen gemäß Artikel 5 Abs. 7 der Anlage I zum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die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vorliegen.

Unterabschnitt 11

Vorschriften für Versicherungsunternehmen

§ 44

Anwendungsbereich

(1)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zu beachten, soweit in diesem Unterabschnit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e dürfen die in diesem Gesetz größenabhängig zugelassenen Erleichterungen nicht in Anspruch nehmen. Die §§ 55, 56 Abs. 1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sind nicht anzuwenden.

(2)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Unternehmen, die den Betrieb von Versicherungsgeschäften zum Gegenstand haben und nicht Träger der Sozialversicherung sind. Dazu gehören auch Unternehmen, die nicht der Versicherungsaufsicht unterliegen oder keine eigene Rechtspersönlichkeit haben. Die Vorschriften über Versicherungsunternehmen sind auch auf Unternehmen anzuwenden, die keine Erlaubnis zum Geschäftsbetrieb als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oder die sich in Abwicklung befinden.

§ 45

Eröffnungsbilanz

(1)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abweichend von § 265 Abs. 6, 7, §§ 266 bis 268 des Handelsgesetzbuchs und unbeschadet einer weiteren Gliederung die Eröffnungsbilanz gemäß der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legung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vom 11. Juli 1973, zuletzt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23. Dezember 1986 (BGBl. 1987 I S. 2), aufzustellen.

(2)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die Rückstellungen gemäß § 56 Abs. 3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zu bilden. § 56 Abs. 4 des 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 ist anzuwenden. § 17 Abs. 4 ist auch auf versicherungstechnische Rückstellungen mit Ausnahme der Beitragsüberträge anzuwenden.

(3) Versicherungsunternehmen haben im Anhang zusätzlich die in § 12 Nr. 3 der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legung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vom 11. Juli 1973 vorgeschriebenen Angaben zu machen.

§ 46

Prüfung. Einreichung

(1) Versicherungsunternehmen können abweichend von § 34 Abs. 1 nur von einem Wirtschaftsprüfer oder eine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geprüft werden.

(2) Die D-Markeröffnungsbilanz, der Anhang sowie die Schlußbilanz zum 30. Juni 1990 sind spätestens vor Ablauf des elf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ie Konzernöffnungsbilanz und der Konzernanhang spätestens vor Ablauf des siebzehnten Monats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in zweifacher Ausfertigung einzureichen. Der Bericht des Prüfers über die Prüfung nach § 33 Abs. 1 Satz 1 ist spätestens vor Ablauf des zwölften Monats nach dem Bilanzstichtag, der Bericht über die Prüfung nach § 33 Abs. 3 Satz 1 spätestens vor Ablauf des neunzehnten Monats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Versicherungswesen in zweifacher Ausfertigung einzureichen.

Abschnitt 7**Straf- und Ordnungsstrafvorschriften.
Zwangsgelder**

§ 47

Strafvorschriften

(1) Die Strafvorschriften der §§ 331 bis 333 des Handelsgesetzbuchs sind auf die Eröffnungsbilanz, den Anhang, die Konzernöffnungsbilanz, den Konzernanhang und die nach diesem Gesetz zu bestellenden Prüfer entsprechend anzuwenden. Satz 1 gilt auch für nicht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betriebene Unternehmen.

(2) § 331 des Handelsgesetzbuchs ist darüber hinaus auch anzuwenden auf die Verletzung von Pflichten durch den Geschäftsleiter (§ 1 Abs. 2 Satz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eines nicht in der Rechtsform einer Kapitalgesellschaft betriebenen Geldinstituts, durch den Inhaber eines in der Rechtsform des Einzelkaufmanns betriebenen Geldinstituts oder durch den Geschäftsleiter im Sinne des § 53 Abs. 2 Nr.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 48

Ordnungsstrafvorschrif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als Mitglied des vertretungsberechtigten Organs oder des Aufsichtsrats eines Unternehmens oder als Geschäftsleiter im Sinne des § 1 Abs. 2 Satz 1 oder des § 53 Abs. 2 Nr. 1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oder als Inhaber eines in der Rechtsform des Einzelkaufmanns betriebenen Unternehmens

1. bei der Aufstellung ode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oder des Anhangs einer Vorschrift

- a) des § 4 Abs. 2 Satz 1 oder 2 oder des § 5 Abs. 1 Satz 1 in Verbindung mit § 243 Abs. 1 oder 2, §§ 244, 245, 246, 247 Abs. 1 oder 2, §§ 248, 249 Abs. 1 Satz 1 oder Abs. 3, § 250 Abs. 1 Satz 1 oder Abs. 2 oder § 25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 b) des § 5 Abs. 1 Satz 1 in Verbindung mit § 253 Abs. 1 Satz 2, Abs. 2 Satz 1, 2 oder 3 oder Abs. 3 Satz 1 oder 2, § 255 Abs. 1 oder 2 Satz 1, 2 oder 6 des Handelsgesetzbuchs oder der §§ 6 bis 18 über die Bewertung,
- c) des § 5 Abs. 1 Satz 2 in Verbindung mit § 265 Abs. 3 bis 8, §§ 266, 268 Abs. 3 bis 7 oder § 272 des Handelsgesetzbuchs oder des § 39 Abs. 1 oder 2 oder des § 45 über die Gliederung oder
- d) des § 19 Abs. 1 bis 3, der §§ 20 oder 22 über die im Anhang zu machenden Angaben,
2. bei der Aufstellung der Konzernöffnungsbilanz oder des Konzernanhangs einer Vorschrift
- a) des § 21 Abs. 3 über den Konsolidierungskreis,
- b) des §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den §§ 5 bis 19 oder § 297 Abs. 2 oder 3 oder § 298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dieser in Verbindung mit § 243 Abs. 1 oder 2, §§ 244, 245, 246, 247 Abs. 1 oder 2, §§ 248, 249 Abs. 1 Satz 1 oder Abs. 3, § 250 Abs. 1 Satz 1 oder Abs. 2 oder § 251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 c) des §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 300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Konsolidierungsgrundsätze oder das Vollständigkeitsgebot,
- d) des § 21 Abs. 4 Satz 1 in Verbindung mit § 311 Abs. 1 Satz 1 des Handelsgesetzbuchs, dieser in Verbindung mit § 312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Behandlung assoziierter Unternehmen, oder
- e) des § 22 über die im Konzernanhang zu machenden Angaben,
3. bei der Offenlegung, Veröffentlichung oder Vervielfältigung einer Vorschrift des § 37 Abs. 1 Satz 1 in Verbindung mit § 328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Form oder Inhalt oder
4. der Vorschrift des § 37 Abs. 4 über die Einreichung der D-Markeröffnungsbilanz
- zuwiderhandelt.

(2) Ordnungswidrig handelt auch, wer zu einer Eröffnungsbilanz oder einem Anhang oder einer Konzernöffnungsbilanz oder einem Konzernanhang, die auf Grund gesetzlicher Vorschriften zu prüfen sind, einen Vermerk nach § 322 des Handelsgesetzbuchs erteilt, obwohl nach § 34 Abs. 5 in Verbindung mit § 319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er oder nach § 34 Abs. 5 in Verbindung mit § 319 Abs. 3 des Handelsgesetzbuchs die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oder Buchprüfungsgesellschaft, für die er tätig wird, nicht Prüfer sein darf.

(3)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r Ordnungsstrafe bis zu fünfzigtausend Deutsche Mark geahndet werden.

§ 49

Festsetzung von Zwangsgeld

Mitglieder des vertretungsberechtigten Organs, bei Einzelunternehmen der Inhaber, die

1. § 1 Abs. 1 über die Pflicht zur Aufstellung einer Eröffnungsbilanz und eines Anhangs,

2. § 21 Abs. 1 über die Pflicht zur Aufstellung einer Konzernöffnungsbilanz und eines Anhangs,
3. § 34 Abs. 4 dieses Gesetzes in Verbindung mit § 318 Abs. 1 Satz 4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Pflicht zur unverzüglichen Erteilung des Prüfungsauftrags,
4. § 34 Abs. 4 dieses Gesetzes in Verbindung mit § 318 Abs. 4 Satz 3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Pflicht, den Antrag auf gerichtliche Bestellung des Prüfers zu stellen,
5. § 34 Abs. 5 dieses Gesetzes in Verbindung mit § 320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Pflichten gegenüber dem Prüfer oder
6. § 37 dieses Gesetzes in Verbindung mit § 325 des Handelsgesetzbuchs über die Pflicht zur Offenlegung der Eröffnungsbilanz oder des Anhangs oder der Konzernöffnungsbilanz oder des Konzernanhangs

nicht befolgen, sind hierzu vom Registergericht durch Festsetzung von Zwangsgeld anzuhalten; § 335 Satz 2 bis 8 des Handelsgesetzbuchs ist anzuwenden. Für die Festsetzung des Zwangsgelds gelten die §§ 132 bis 139 des Gesetzes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Abschnitt 8

Steuern. Gebühren

§ 50

Steuerliche Eröffnungsbilanz und Folgewirkungen

(1) Steuerpflichtige, die Rechtsträger eines Unternehmens nach § 1 sind, hab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auch für die steuerrechtliche Gewinnermittlung zu befolgen. Ein Steuerpflichtiger, der Rechtsträger eines Unternehmens ist, das nach § 1 Abs. 5 als zum 1. Juli 1990 entstanden angesehen wird, ist mit dem Unternehmen vom 1. Juli 1990 an für die Steuern vom Einkommen und Ertrag steuerpflichtig. Wird die Übertragung von Vermögensgegenständen oder Schulden nach § 4 Abs. 3 bereits in der Eröffnungsbilanz der betroffenen Unternehmen zum 1. Juli 1990 berücksichtigt, so gilt dies auch für die Steuerpflicht der Rechtsträger der betroffenen Unternehmen.

(2) Zum 1. Juli 1990 ist eine steuerliche Eröffnungsbilanz aufzustellen, die, abgesehen von den folgenden Abweichungen, der handelsrechtlichen Eröffnungsbilanz entsprechen muß. Ein nach § 9 Abs. 3 oder § 31 Abs. 1 Nr. 1 Satz 2 und Nr. 2 und 3 gebildeter Aktivposten ist nicht anzusetzen; als betriebsgewöhnliche Nutzungsdauer eines Aktivpostens nach § 31 Abs. 1 Nr. 1 Satz 1 gilt ein Zeitraum von 15 Jahren. § 11 Abs. 1 Satz 1 ist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ß der Beteiligungsbuchwert dem ausgewiesenen anteiligen Eigenkapital in der steuerlichen Eröffnungsbilanz des Unternehmens entspricht, an dem die Beteiligung besteht. § 5 Abs. 2, 3 und 5 des Einkommensteuergesetzes ist anzuwenden. Rückstellungen nach § 5 Abs. 4 des Einkommensteuergesetzes und Rückstellungen nach § 249 Abs. 1 Satz 2 Nr. 1, Satz 3 und Abs. 2 des Handelsgesetzbuchs dürfen nicht gebildet werden. § 9 Abs. 2 Satz 3 und § 10 Abs. 1 Satz 2 zweiter Halbsatz und Absatz 2 Satz 2 sind nicht anzuwenden. Auf

die Bildung von Pensionsrückstellungen ist § 54 Abs. 1 bis 3 und 5 entsprechend anzuwenden.

(3) Die Berichtigung von Ansätzen nach § 36 führt zu einer Berichtigung der steuerlichen Eröffnungsbilanz und etwaiger Folgebilanzen. Sind bereits Steuerbescheide erlassen worden, so sind sie zu ändern, soweit die Berichtigung von Bilanz- oder Wertansätzen zu einem geänderten Gewinn oder Verlust führt oder sich auf die Feststellung von Einheitswerten auswirkt.

(4) Beträge, die zum Ausgleich eines Kapitalentwertungskontos nach § 26 Abs. 4 oder § 28 Abs. 1 verwendet werden, dürfen bei der steuerrechtlichen Gewinnermittlung nicht abgezogen werden.

(5) Auf Steuerpflichtige, die freiwillig Bücher führen und regelmäßig Abschlüsse machen, ist Absatz 1 bis 4 entsprechend anzuwenden.

§ 51

Umstellungsbedingte Vermögensänderungen

(1) Die aus der Eröffnungsbilanz und der Neufestsetzung nach § 26 Abs. 2 bis 4, §§ 27, 28, 30 sich ergebenden zahlenmäßigen Veränderungen im Vermögen der in § 50 Abs. 1 oder 5 bezeichneten Steuerpflichtigen sowie deren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wirken sich auf die Steuern vom Einkommen und Ertrag nicht aus. Dies gilt insbesondere für die Bildung von Rücklagen oder die Auflösung bisheriger Unterbewertungen, wenn die Erträge auf der Neubewertung von Vermögensgegenständen und Schulden beruhen, die spätestens am 1. Juli 1990 Betriebsvermögen gewesen sind oder auf das Unternehmen mit Wirkung vom 1. Juli 1990 übertragen worden sind, oder auf dem Erlaß von Schulden beruhen.

(2) Die aus der Neufestsetzung sich ergebenden zahlenmäßigen Veränderungen im Vermögen der in § 1 bezeichneten Gesellschaften und deren Gesellschafter und im Vermögen der in § 1 bezeichneten Genossenschaften und deren Genossen unterliegen nicht den Steuern vom Kapitalverkehr.

§ 52

Steuerliche Ausgangswerte in anderen Fällen

(1) Bei Steuerpflichtigen, die ihren Gewinn nach § 4 Abs. 3 des Einkommensteuergesetzes ermitteln, gelt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der Wirtschaftsgüter, die spätestens am 1. Juli 1990 Anlagevermögen gewesen sind oder auf den Steuerpflichtigen mit Wirkung vom 1. Juli 1990 übertragen worden sind, die Werte, die sich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 7 bis 11 und 18 ergeben. Wirtschaftsgüter nach Satz 1 sind unter Angabe ihres Werts zum 1. Juli 1990 in ein besonderes Verzeichnis (Anlageverzeichnis) aufzunehmen. Ergibt sich bis zum 31. Dezember 1994 einschließlich, daß sie zum 1. Juli 1990 nicht angesetzt werden durften oder zu Unrecht nicht oder wesentlich zu hoch oder zu niedrig angesetzt worden sind, so ist das Anlageverzeichnis insoweit zu berichtigen; sind bereits Steuerbescheide erlassen worden, so sind sie zu ändern, soweit die Berichtigung zu einem geänderten Gewinn oder Verlust führt.

(2) Absatz 1 Satz 1 und 3 ist auf Steuerpflichtige mit Einkünften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Kapitalvermö-

gen, Vermietung und Verpachtung oder mit anderen Einkünften nach §§ 17 und 22 des Einkommensteuer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Rückübertragungen nach dem Vermögensgesetz sind keine Anschaffungen. In diesen Fällen gelt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die Werte, die sich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Absatzes 1 Satz 1 und 3 ergeben.

§ 53

Wirtschaftsjahre 1990 und steuerliche Schlußbilanz

Bei Steuerpflichtigen mit Einkünften nach § 2 Abs. 3 Nr. 1 bis 3 des Einkommensteuergesetzes sind Wirtschaftsjahre im Kalenderjahr 1990 die Zeiträume vom 1. Januar bis zum 30. Juni und vom 1. Juli bis zum 31. Dezember. In der steuerlichen Schlußbilanz zum 31. Dezember können Rückstellungen nach § 5 Abs. 4 des Einkommensteuergesetzes nicht und Pensionsrückstellungen nu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54 gebildet werden.

§ 54

Pensionsrückstellungen

(1) Für eine Pensionsverpflichtung darf eine Rückstellung (Pensionsrückstellung) nur gebildet werden, wenn

1. der Pensionsberechtigte einen Rechtsanspruch auf einmalige oder laufende Pensionsleistungen hat,
2. die Pensionszusage keinen Vorbehalt enthält, daß die Pensionsanwartschaft oder die Pensionsleistung gemindert oder entzogen werden kann, oder ein solcher Vorbehalt sich nur auf Tatbestände erstreckt, bei deren Vorliegen nach allgemeinen Rechtsgrundsätzen unter Beachtung billigen Ermessens eine Minderung oder ein Entzug der Pensionsanwartschaft oder der Pensionsleistung zulässig ist, und
3. die Pensionszusage schriftlich erteilt ist.

(2)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erstmals gebildet werden

1. vor Eintritt des Versorgungsfalls für das Wirtschaftsjahr, in dem die Pensionszusage erteilt wird, frühestens jedoch für das Wirtschaftsjahr, bis zu dessen Mitte der Pensionsberechtigte das 30. Lebensjahr vollendet,
2. nach Eintritt des Versorgungsfalls für das Wirtschaftsjahr, in dem der Versorgungsfall eintritt.

(3)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höchstens mit dem Teilwert der Pensionsverpflichtung angesetzt werden. Als Teilwert einer Pensionsverpflichtung gilt

1. vor Beendigung des Dienstverhältnisses des Pensionsberechtigten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a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abzüglich des sich auf denselben Zeitpunkt ergebenden Barwerts betragsmäßig gleichbleibender Jahresbeträge. Die Jahresbeträge sind so zu bemessen, daß am Beginn des Wirtschaftsjahrs, in dem das Dienstverhältnis begonnen hat, ihr Barwert gleich dem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ist; die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sind dabei mit dem Betrag anzusetzen, der sich nach den Verhältnissen am Bilanzstichtag ergibt. Es sind die Jahresbeträge zugrunde zu legen, die vom Beginn des Wirtschaftsjahrs, in dem das

Dienstverhältnis begonnen hat, bis zu dem in der Pensionszusage vorgesehenen Zeitpunkt des Eintritts des Versorgungsfalls rechnermäßig aufzubringen sind. Erhöhungen oder Verminderungen der Pensionsleistungen nach de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die hinsichtlich des Zeitpunkts ihres Wirksamwerdens oder ihres Umfangs ungewiß sind, sind bei der Berechnung des Barwerts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und der Jahresbeträge erst zu berücksichtigen, wenn sie eingetreten sind. Wird die Pensionszusage erst nach dem Beginn des Dienstverhältnisses erteilt, so ist die Zwischenzeit für die Berechnung der Jahresbeträge nur insoweit als Wartezeit zu behandeln, als sie in der Pensionszusage als solche bestimmt ist. Hat das Dienstverhältnis schon vor der Vollendung des 30. Lebensjahrs des Pensionsberechtigten bestanden, so gilt es als zu Beginn des Wirtschaftsjahrs begonnen, bis zu dessen Mitte der Pensionsberechtigte das 30. Lebensjahr vollendet;

2. nach Beendigung des Dienstverhältnisses des Pensionsberechtigten unter Aufrechterhaltung seiner Pensionsanwartschaft oder nach Eintritt des Versorgungsfalls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am Schluß des Wirtschaftsjahrs; Nummer 1 Satz 4 gilt sinngemäß.

Bei der Berechnung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tung sind ein Rechnungszinsfuß von sechs vom Hundert und die anerkannten Regeln der Versicherungsmathematik anzuwenden.

(4) Eine Pensionsrückstellung darf höchstens um den Unterschied zwischen dem Teilwert der Pensionsverpflichtung am Schluß des am 31. Dezember 1990 endenden Wirtschaftsjahrs (Erstjahr) und dem Beginn des Wirtschaftsjahrs erhöht werden. Erhöht sich am Schluß des Erstjahrs gegenüber dem Beginn dieses Wirtschaftsjahrs der Barwert der künftigen Pensionsleistungen um mehr als 25 vom Hundert, so kann die für das Erstjahr zulässige Erhöhung der Pensionsrückstellung auf dieses Wirtschafts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Darf am Schluß des Erstjahrs mit der Bildung einer Pensionsrückstellung begonnen werden, darf die Rückstellung bis zur Höhe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tung am Schluß dieses Wirtschaftsjahrs gebildet werden. Diese Rückstellung kann auf das Erst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Endet das Dienstverhältnis des Pensionsberechtigten unter Aufrechterhaltung seiner Pensionsanwartschaft im Erstjahr oder tritt der Versorgungsfall in diesem Wirtschaftsjahr ein, darf die Pensionsrückstellung stets bis zur Höhe des Teilwerts der Pensionsverpflichtung gebildet werden. Die für dieses Wirtschaftsjahr zulässige Erhöhung der Pensionsrückstellung kann auf das Erstjahr und die beiden folgenden Wirtschaftsjahre gleichmäßig verteilt werden.

(5) Absatz 3 und 4 ist entsprechend anzuwenden, wenn der Pensionsberechtigte zu dem Pensionsverpflichteten in einem anderen Rechtsverhältnis als einem Dienstverhältnis steht.

§ 55

Einlagen

Werden einem Betrieb innerhalb von drei Jahren nach dem 30. Juni 1990 Wirtschaftsgüter als Einlage zugeführt, die vor dem 1. Juli 1990 angeschafft oder hergestellt wor-

den sind, so gilt der Betrag, den der Steuerpflichtige in einer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hätte ansetzen können, als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 56

Gebühren

(1) Gerichtsgebühren und notarielle Beurkundungsgebühren, die anlässlich de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d der Neufestsetzung der Kapitalverhältnisse nach diesem Gesetz entstehen, ermäßigen sich um fünfzig vom Hundert. Übersteigt die nach Satz 1 zu berechnende Gebühr für die Beurkundung von Versammlungsbeschlüssen zweitausend Deutsche Mark, so ermäßigt sich der zweitausend Deutsche Mark übersteigende Betrag um weitere fünfundzwanzig vom Hundert. Fließen die Gebühren dem Notar selbst zu, ermäßigen sich die Gebühren entsprechend § 144 Abs. 1 des Gesetzes über die Kosten i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Kosten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361-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5 des Gesetzes vom 5. April 1990 (BGBl. I S. 701).

(2) Die Ermäßigung gilt auch für die Gebühren, die bei einer Umwandlung von Gesellschaften entstehen, sofern die Umwandlung nicht später als die Neufestsetzung beschlossen wird und nach der Eröffnungsbilanz das Nennkapital ei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nicht erreicht oder das übertragene Eigenkapital der Aktiengesellschaft oder der 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einhunderttausend Deutsche Mark oder das übertragene Eigenkapital der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fünfzigtausend Deutsche Mark nicht erreicht. Die Ermäßigung erstreckt sich nicht auf die Gebühren, die anlässlich des Ausgleichs eines Kapitalentwertungskontos entstehen.

(3) Wird ein Beschluß, für dessen Beurkundung die Gebühren nach Absatz 1 zu ermäßigen sind, zugleich mit anderen nicht unter Absatz 1 fallenden Beschlüssen beurkundet, angemeldet oder eingetragen und ist dafür eine einheitliche Gebühr zu erheben, so ermäßigt sich nur der Teilbetrag der Gesamtgebühr, der die Gebühr, die für das nicht unter Absatz 1 fallende Geschäft bei gesonderter Vornahme zu erheben wäre, übersteigt.

(4) Die Ermäßigung erstreckt sich nicht auf die Zusatzgebühr für Beurkundungen außerhalb der Gerichtsstelle und für fremdsprachliche Erklärungen; die Gebühr für die Beurkundung außerhalb der Gerichtsstelle darf jedoch den Betrag der für das Geschäft selbst zu erhebenden (ermäßigten) Gebühr nicht übersteigen.

(5) Die Bestimmungen über die Mindestgebühr bleiben unberührt.

Abschnitt 9

Verfahren der Kapitalneufestsetzung. Sonstige Vorschriften

§ 56a

Einfache Mehrheit

(1) Für den Beschluß der Hauptversammlung oder der Gesellschafterversamml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über die Neufestsetz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und die Einziehung von Anteilen genügt die einfache Mehrheit des bei der Beschlußfassung vertretenen gezeichneten Kapitals ohne Rücksicht auf die Stimmenzahl. Eines Sonderbeschlusses der einzelnen Gattungen von Anteilen bedarf es nicht. Dies gilt auch dann, wenn die Satzung oder der Gesellschaftsvertrag etwas anderes bestimmen. Für eine zugleich mit der Neufestsetzung beschlossene Erhöhung des gezeichneten Kapitals gelten die für die Rechtsform maßgeblichen Vorschriften über die Kapitalerhöhung nur, wenn diese nicht aus vorhandenem Eigenkapital erfolgt.

(2) Für den Beschluß der Mitgliederversammlung von Genossenschaften, durch den die Geschäftsguthaben, die Geschäftsanteile und die Haftsummen neu festgesetzt werden, genügt die einfache Mehrheit der abgegebenen Stimmen, auch wenn gesetzliche Vorschriften oder das Statut etwas anderes bestimmen. Wird mit der Neufestsetzung gleichzeitig eine Erhöhung der neu festgesetzten Geschäftsanteile beschlossen, so sind die Vorschriften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nur anzuwenden, wenn die Erhöhung nicht aus vorhandenem Eigenkapital erfolgt.

§ 56b

Inhalt der Anmeldung. Prüfung durch das Gericht

(1) Bei der Anmeldung des Beschlusses über die Neufestsetzung sind die festgestellte Eröffnungsbilanz und der Bericht des Vorstands oder der Geschäftsführer zum Handelsregister des Sitzes der Kapitalgesellschaft einzureichen; dies gilt bei Genossenschaften entsprechend für die Anmeldung zum Genossenschaftsregister. Bei der Anmeldung haben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zu erklären, daß die Beschlüsse über die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und die Neufestsetzung nicht angefochten sind oder die Anfechtung rechtskräftig zurückgewiesen ist.

(2) Die Geschäftsführer von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haben eine von ihnen unterschriebene Liste der Gesellschafter beizufügen, aus der Name, Vorname, Stand und Wohnort der Gesellschafter sowie ihre Stammeinlagen und die darauf noch zu leistenden Einzahlungen hervorgehen.

(3) Das Registergericht kann die Eintragung der Neufestsetzung auch ablehnen, wenn die Prüfer den Bestätigungsvermerk für die Eröffnungsbilanz versagt haben.

(4) Ist die Eröffnungsbilanz nicht geprüft worden, so kann das Gericht die Prüfung anordnen und einen Prüfer bestellen, wenn Anhaltspunkte dafür bestehen, daß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die gesetzlichen Vorschriften nicht beachtet wurden oder Unredlichkeiten vorgekommen sind. Vor der Anordnung sind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zu hören.

(5)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haben auch eine vorläufige Neufestsetzung nach § 28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oder das Genossenschaftsregister anzumelden. Die Durchführung des Ausgleichs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durch Tilgung oder durch andere Maßnahmen ist gleichfalls zur Eintragung anzumelden. In der Anmeldung ist zu erklären, in welcher Weise der Ausgleich durchgeführt ist.

(6) Die Kapitalneufestsetzung ist bewirkt, sobald sie in das Handelsregister oder Genossenschaftsregister des Sitzes des Unternehmens eingetragen ist.

§ 56c

Umtausch und Zusammenlegung von Anteilen

(1) Die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Aktien sind in Aktien, die auf Deutsche Mark lauten, umzutauschen oder abzustempeln. Müssen Aktien zusammengelegt werden, so ist auf den Umtausch und die Abstempelung § 226 des Aktien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2) Bevor die Neufestsetzung in das Handelsregister oder in das Genossenschaftsregister eingetragen ist, dürfen die sich aus ihr ergebenden neuen Geschäftsanteile nicht gebildet werden. Werden im Falle der Verminderung der Zahl der Geschäftsanteile der Gesellschaft oder Genossenschaft Anteile nicht zur Verwertung für Rechnung der Beteiligten zur Verfügung gestellt, so sind die anstelle der bisherigen Geschäftsanteile zu bildenden neuen Geschäftsanteile für Rechnung der Beteiligten durch die Gesellschaft oder Genossenschaft im Wege der öffentlichen Versteigerung zu verkaufen. Der Erlös ist den Beteiligten nach Abzug der Kosten auszuzahlen oder, wenn ein Recht zur Hinterlegung besteht, zu hinterlegen.

§ 56d

Überschuldung oder Verlust des halben gezeichneten Kapitals

(1)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sind bis zur Beschlußfassung über die Kapitalneufestsetzung durch das dafür zuständige Organ nicht verpflichtet, wegen einer bei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sich ergebenden Überschuldung nach § 92 Abs. 2 Satz 2 des Aktiengesetzes, § 64 Abs. 1 Satz 2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oder § 99 Abs. 1 Satz 2 des Gesetzes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die Eröffnung des Gesamtvollstreckungsverfahrens zu beantragen. Während dieser Zeit sind der Vorstand und die Geschäftsführer auch von der Pflicht zur Einberufung einer Versammlung nach § 92 Abs. 1 des Aktiengesetzes oder § 49 Abs. 3 des Gesetzes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wegen eines Verlustes des gezeichneten Kapitals, der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befreit.

(2) Ist eine vorläufige Neufestsetzung im Handelsregister eingetragen, so sind der Vorstand oder die Geschäftsführer wegen eines Verlustes des gezeichneten Kapitals, der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ergibt, für die Zeit, die zum Ausgleich des Kapitalentwertungskontos vorgesehen ist, von der Pflicht zur Einberufung einer Versammlung d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befreit.

§ 57

Auflösung

(1)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ie ihre Kapitalverhältnisse bis zum 31. Dezember 1991 nicht nach diesem Gesetz neu festgesetzt haben, sind mit dem Ablauf dieses Tages aufgelöst. Wird die Frist zur Fest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im Einzelfall über den

31. Dezember 1991 hinaus verlängert, so tritt für die Gesellschaft an Stelle des 31. Dezember 1991 der drei Monate nach Ablauf der verlängerten Frist liegende Tag. Ist der Beschluß über die Neufestsetzung vor dem 31. Dezember 1991 angefochten worden, so tritt an die Stelle des 31. Dezember 1991 der sechs Monate nach dem Tag der Rechtskraft der Entscheidung liegende Tag.

(2)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eren Grundkapital nach der Neufestsetzung auf weniger als die nach der Rechtsform zulässigen Mindestbeträge lautet und die eine Erhöhung des Nennkapitals beschlossen haben, sind außerdem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1 aufgelöst, wenn die Erhöhung des Nennkapitals auf den zulässigen Mindestnennbetrag bis zu diesem Zeitpunkt nicht wirksam geworden ist.

(3) Aktiengesellschaften, Kommanditgesellschaften auf Aktien und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die von der Befugnis, ein Kapitalentwertungskonto zu bilden, Gebrauch gemacht haben, sind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7 aufgelöst, wenn die Durchführung des Ausgleichs nicht bis zu diesem Zeitpunkt in das Handelsregister eingetragen worden ist.

(4) Absatz 1 Satz 1 ist entsprechend auf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anzuwenden, wenn die notwendigen Änderungen des Statuts nicht bis zum 31. Dezember 1991 in das Genossenschaftsregister eingetragen worden sind.

§ 58

Geschäftsjahr

(1) Die Unternehmen haben ihr Geschäftsjahr neu festzusetzen. Das erste Geschäftsjahr kann abweichend von § 240 Abs. 2 Satz 2 des Handelsgesetzbuchs bis zu achtzehn Monate, bei Geldinstituten und Versicherungsunternehmen bis zu zwölf Monate umfassen. Der Beschluß über die Verlängerung des Geschäftsjahres kann nur bis zum Ablauf des 30. Juni 1991 gefaßt werden. Einer Änderung der Satzung oder des Gesellschaftsvertrages bedarf es

nicht, wenn das Geschäftsjahr lediglich auf Grund dieser Vorschrift verlängert wird.

(2) Unternehmen, die von Absatz 1 Gebrauch machen, müssen für den 31. Dezember 1990 einen Jahresabschluß nach den für sie maßgeblichen Vorschriften des Handelsrechts aufstellen. Eines Anhangs bedarf es nicht. Der Jahresabschluß braucht weder geprüft noch offengelegt zu werden.

Abschnitt 10

Schlußvorschriften

§ 59

Ermächtigung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und dem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Vorschriften zur Ausführung dieses Gesetzes über Form und Inhalt der nach den §§ 1, 20, 21, 39 und 45 aufzustellenden Unterlagen, die Kapitalausstattung der Unternehmen sowie über die Durchführung der Prüfung, die Feststellung und Offenlegung dieser Unterlagen und des dabei einzuhaltenden Verfahrens zu erlassen, soweit diese Vorschriften erforderlich sind, um die Durchführung der Währungsumstellung im Sinne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und der Zielsetzung dieses Gesetzes zu gewährleisten.

§ 60

Anwendung

Dieses Gesetz ist mit Wirkung vom 1. Juli 1990 im gesamten Bundesgebiet anzuwenden, die Bestimmungen des Abschnitts 7 jedoch erst vom 29. März 1991 an. Für das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 Gebiet sind die Bestimmungen des Abschnitts 7 mit Ausnahme des § 48 Abs. 1 Nr. 4 mit Wirkung vom 29. September 1990 anzuwenden.

문서 번호 55

재산법 개정안

1991 년 4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연방법무부 장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경제장관 헬무트 하우스만

내용:

이 문서는 통일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유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해결재산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해결재산에 관한 규정법은 동독 정부 하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상없이 또는 아주 낮은 보상만 받고 인민소유재산으로 몰수되었던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건물이 세워진 대지와 관리비용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낮은 임대료로 인해 높은 채무를 지게 되면서 인민소유로 전환되었던 건물에도 해당된다. 이 법은 나아가 국가가 관리해 오던 동독을 탈출하였거나 불법으로 떠난 동독 주민의 재산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나아가 1933 년 1 월 30 일부터 1945 년 5 월 8 일 사이 나치 체제에서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박해받고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몰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상실한 시민과 단체의 재산권에도 적용된다.

개인과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재단이 합법적으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재산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대지와 건물의 이용방식이 이미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공동주택 또는 주택단지의 건축에 이용되었을 경우 그리고 건물의 반환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의 생산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 또한 재산권 반환되지 않는다. 몰수된 기업에 대한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몰수되었던 시점 이후의 경제발전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업의 조건이 유사할 때에는 그것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원소유자에게 재산을 반환해 주지 못하거나 원소유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기업이 인민소유로 몰수되었을 당시의 가치에 따라 도이치마르크로 보상해 준다. 당시 동독에서 매도한 가격 또는 포기하면서 받은 금액은 보상액에서 제하도록 한다. 이 때 계산기준은 동독 마르크와 서독 도이치마르크 간의 2:1 비율이다.

여러 사람이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기업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기업으로 또는 사업장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 기업의 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신청에 의해

해당 관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람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평의회에 분할문제에 관해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관할 할 관청이 연방주 차원에서 설치될 때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관청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 나아가 연방주 정부는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관할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해결재산문제에 대한 규정을 관할하는 청급의 연방관청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를 담당할 연방관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26, S. 957-970, Ausgabetag 26.04.1991

1991 **Ausgegeben zu Bonn am 26. April 1991** **Nr. 26**

Tag	Inhalt	Seite
18. 4. 91	Neufassung des Vermögensgesetzes III-19	957
18. 4. 91	Neufassung des D-Markbilanzgesetzes III-29	971
22. 4. 91	Neufassung des Investitionsgesetzes III-18	994
18. 4. 91	Neufassung der Grundstücksverkehrsverordnung III-20	999

Hinweis auf andere Verkündungsblätter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12	1003
Verkündungen im Bundesanzeiger	1004

**Bekanntmachung
der Neufassung des Vermögensgesetzes**

Vom 18. April 1991

Auf Grund des Artikels 14 des Gesetzes vom 22. März 1991 (BGBl. I S. 766) wird nachstehend der Wortlaut des Vermögensgesetzes in der vom 29. März 1991 an geltenden Fassung bekanntgemacht. Die Neufassung berücksichtigt:

1. das am 29. September 1990 in Kraft getretene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m 23. September 1990 (BGBl. 1990 II S. 885, 1159),
2. den am 29. März 1991 in Kraft getretenen Artikel 1 des eingangs genannten Gesetzes.

Bonn, den 18. April 1991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Kinkel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ermögensgesetz - VermG)

Abschnitt I

Allgemeine Bestimmungen

§ 1

Geltungsbereich

(1) Dieses Gesetz regelt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an Vermögenswerten, die

- a) entschädigungslos enteignet und in Volkseigentum überführt wurden;
- b) gegen eine geringere Entschädigung enteignet wurden, als sie Bürgern der früher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stand;
- c) durch staatliche Verwalter oder nach Überführung in Volkseigentum durch den Verfügungsberechtigten an Dritte veräußert wurden;
- d) auf der Grundlage des Beschlusses des Präsidiums des Ministerrates vom 9. Februar 1972 und im Zusammenhang stehender Regelungen in Volkseigentum übergeleitet wurden.

(2) Dieses Gesetz gilt desweiteren für bebaute Grundstücke und Gebäude, die auf Grund nicht kostendeckender Mieten und infolgedessen eingetretener Überschuldung durch Enteignung, Eigentumsverzicht, Schenkung oder Erbausschlagung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3) Dieses Gesetz betrifft auch Ansprüche an Vermögenswerten sowie Nutzungsrechte, die auf 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z. B. durch Machtmißbrauch, Korruption, Nötigung oder Täuschung von Seiten des Erwerbers, staatlicher Stellen oder Dritter, erworben wurden.

(4) Dieses Gesetz regelt ferner die Aufhebung der

- staatlichen Treuhand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von Bürgern, die das Gebie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hne die zum damaligen Zeitpunkt erforderliche Genehmigung verlassen haben;
- vorläufigen 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von Bürg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sowie von juristischen Personen mit Si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Berlin (West), die Staatsorgan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urch Rechtsvorschrift übertragen wurde;
- Verwaltung des ausländischen Vermögens, die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tragen wurde

(im folgenden staatliche Verwaltung genannt) und die damit im Zusammenhang stehenden Ansprüche der Eigentümer und Berechtigten.

(5) Dieses Gesetz schließt die Behandlung von Forderungen und anderen Rechten in bezug auf Vermögenswerte gemäß Absatz 1 bis 4 ein.

(6) Dieses Gesetz ist entsprechend auf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von Bürgern und Vereinigungen anzuwenden, die in der Zeit vom 30. Januar 1933 bis zum 8. Mai 1945 aus rassistischen, politischen, religiösen oder weltanschaulichen Gründen verfolgt wurden und deshalb ihr Vermögen infolge von Zwangsverkäufen, Enteignungen oder auf andere Weise verloren haben.

(7) Dieses Gesetz gilt entsprechend für die Rückgabe von Vermögenswerte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nach anderen Vorschriften erfolgten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straf-, ordnungsstraf- oder verwaltungsrechtlicher Entscheidungen steht.

(8) Dieses Gesetz gilt nicht für

- a) Enteignungen von Vermögenswerten auf besatzungsrechtlicher oder besatzungshoheitlicher Grundlage;
- b)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die seiten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urch zwischenstaatliche Vereinbarungen geregelt wurden;
- c) Anteilrechte an der Altguthabenablösungsanleihe;
- d) für Ansprüche von Gebietskörperschaften des beitretenden Gebiets gemäß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soweit sie vom Kommunalvermögensgesetz vom 6. Juli 1990 (GBl. I Nr. 42 S. 660) erfaßt sind.

§ 2

Begriffsbestimmung

(1) Berechtig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natürliche und juristische Personen sowie 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deren Vermögenswerte von Maßnahmen gemäß § 1 betroffen sind, sowie ihre Rechtsnachfolger.

(2) Vermögenswer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bebaute und unbebaute Grundstücke sowie rechtlich selbständige Gebäude und Baulichkeiten (im folgenden Grundstücke und Gebäude genannt), Nutzungsrechte und dingliche Rechte an Grundstücken oder Gebäuden, bewegliche Sachen sowie gewerbliche Schutzrechte, Urheberrechte und verwandte Schutzrechte. Vermögenswerte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auch Kontoguthaben und sonstige auf Geldzahlungen gerichtete Forderungen sowie Eigentum/Beteiligungen an Unternehmen oder an Betriebsstätten/Zweigniederlassungen von Unternehmen mit Sitz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3) Verfügungsberechtigter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bei der Rückgabe von Unternehmen derjenige, in dessen Eigentum oder Verfügungsmacht das entzogene Unter-

nehmen ganz oder teilweise steht, sowie bei Kapitalgesellschaften deren unmittelbare oder mittelbare Anteilseigner und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anderen Vermögenswerten diejenige Person, in deren Eigentum oder Verfügungsmacht der Vermögenswert steht. Als Verfügungsberechtigter gilt auch der staatliche Verwalter. Stehen der Treuhandanstalt die Anteilsrechte an Verfügungsberechtigten nach Satz 1 unmittelbar oder mittelbar allein zu, so vertritt sie diese allein.

(4) Unter Schädigung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jede Maßnahme gemäß § 1 zu verstehen.

Abschnitt II

Rückübertragung von Vermögenswerten

§ 3

Grundsatz

(1) Vermögenswerte, die den Maßnahmen im Sinne des § 1 unterlagen und in Volkseigentum überführt oder an Dritte veräußert wurden, sind auf Antrag an die Berechtigten zurückzuübertragen, soweit dies nicht nach diesem Gesetz ausgeschlossen ist. Der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Rückgabe oder Entschädigung kann abgetreten, verpfändet oder gepfändet werden. Ein Berechtigter, der einen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stellt oder stellen könnte, kann seinen Antrag nicht auf die Rückgabe einzelner Vermögensgegenstände beschränken, die sich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in seinem Eigentum befanden; § 6 Abs. 6a Satz 1 bleibt unberührt.

(2) Werden von mehreren Personen Ansprüche auf Rückübertragung desselben Vermögenswertes geltend gemacht, so gilt derjenige als Berechtigter, der von einer Maßnahme gemäß des § 1 als Erster betroffen war.

(3) Liegt eine Anmeldung nach der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vom 11. Juli 1990 (GBl. I Nr. 44 S. 718), zuletzt geändert durch die 2. 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 vom 21. August 1990 – im folgenden Anmeldeverordnung genannt – vor, so ist der Verfügungsberechtigte verpflichtet, den Abschluß dinglicher Rechtsgeschäfte oder die Eingehung langfristiger vertraglicher Verpflichtungen ohne Zustimmung des Berechtigten zu unterlassen. Ausgenommen sind solche Rechtsgeschäfte, die

- a) zur Erfüllung von Rechtspflichten des Eigentümers, insbesondere bei Anordnung eines Modernisierungs- und Instandsetzungsgebots nach § 177 des Baugesetzbuchs zur Beseitigung der Mißstände und zur Behebung der Mängel oder
- b) zur Erhaltung und Bewirtschaftung des Vermögenswerts

erforderlich sind. Ausgenommen sind ferner Instandsetzungsmaßnahmen, wenn die hierfür aufzuwendenden Kosten den Verfügungsberechtigten als Vermieter nach Rechtsvorschriften zu einer Erhöhung der jährlichen Miete berechtigen. Der Berechtigte ist verpflichte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aufgewendeten Kosten, soweit diese durch eine instandsetzungsbedingte Mieterhöhung nicht bereits ausgeglichen sind, zu erstatten, sobald über di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 bestandskräftig entschieden ist. Satz 2 gilt entsprechend für Maßnahmen der in Satz 2 Buchstabe a bezeichneten Art, die ohne eine

Anordnung nach § 177 des Baugesetzbuchs vorgenommen werden, wenn die Kosten der Maßnahmen von der Gemeinde oder einer anderen Stelle nach Maßgabe des § 177 Abs. 4 und 5 des Baugesetzbuchs erstattet werden.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diese Rechtsgeschäfte so zu führen, wie das Interesse des Berechtigten mit Rücksicht auf dessen wirklichen oder mutmaßlichen Willen es erfordert, soweit dem nicht das Gesamtinteresse des vo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geführten Unternehmens entgegensteht; § 678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ist entsprechend anzuwenden, jedoch bleiben die Befugnisse als gegenwärtig Verfügungsberechtigter in den Fällen des § 177 des Baugesetzbuchs und der Sätze 3 und 5 sowie nach dem Investitionsgesetz von diesem Satz unberührt. Der Verfügungsberechtigte ist zur Abwendung der Gesamtvollstreckung nicht verpflichtet, wenn der Berechtigte trotz Aufforderung innerhalb eines Monats einen Antrag auf vorläufige Einweisung nach § 6a nicht stellt oder ein solcher Antrag abgelehnt worden ist. Dies gilt auch bei verspäteter Anmeldung.

(4) Wird die Anmeldefrist (§ 3 der Anmeldeverordnung) versäumt und liegt keine verspätete Anmeldung vor, kann der Verfügungsberechtigte über das Eigentum verfügen oder schuldrechtliche oder dingliche Verpflichtungen eingehen. Ist über das Eigentum noch nicht verfügt worden, so kann der Berechtigte de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noch geltend machen. Anderenfalls steht ihm nur noch ein Anspruch auf den Erlös zu.

(5)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sich vor einer Verfügung zu vergewissern, daß keine Anmeldung im Sinne des Absatzes 3 vorliegt.

(6) Die für die Rückgabe zuständige Behörde ha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über ein Unternehmen, in den Fällen des § 2 Abs. 3 Satz 3 der Treuhandanstalt,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Antragstellung zu gestatten, dieses trotz Vorliegens eines Antrags auf Rückgabe an einen Dritten zu veräußern oder langfristig zu verpachten, sofern über den Antrag des Berechtigten auf Rückgabe oder vorläufige Einweisung, wenn ein solcher Antrag nach § 6a gestellt worden ist, noch nicht bestandskräftig entschieden worden ist und wenn

1. die Maßnahme geeignet ist,
 - a) Arbeitsplätze zu schaffen oder zu sichern oder
 - b) die Wettbewerbsfähigkeit verbessernde Investitionen zu ermöglichen oder
2. der Berechtigte keine Gewähr dafür bietet, daß er das Unternehmen fortführen oder sanieren wird.

Dem Antrag des Verfügungsberechtigten nach Satz 1, der nur bis zum 31. Dezember 1993 gestellt werden kann, darf die Behörde nur entsprechen, wenn glaubhaft gemacht wird, daß der Erwerber oder Pächter nach seinen persönlichen und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n hinreichend Gewähr bietet, daß er das Unternehmen fortführen oder es sanieren wird. Die Behörde hat auf Antrag des Berechtigten die Rückabwicklung anzuordnen, wenn der Erwerber oder Pächter die für die ersten zwei Jahre zugesagten Maßnahmen nicht durchführt oder hiervon wesentlich abweicht, es sei denn, daß dies auf zum Zeitpunkt der Veräußerung oder Verpachtung nicht vorhersehbare dringende betriebliche Erfordernisse zurückzuführen ist.

(7)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6 hat die zuständige Behörde dem Verfügungsberechtigten selbst zu erlauben, Maßnahmen zur Erreichung von in Absatz 6

Satz 1 Nr. 1 bezeichneten Zwecken durchzuführen, wenn er bereit ist, dem Unternehmen das hierfür erforderliche Eigenkapital zuzuführen und er dieses innerhalb einer von der Behörde zu bestimmenden Frist einbringt. Das zugeführte Eigenkapital ist in eine Kapitalrücklage einzustellen, die für die Dauer von fünf Jahren nach Einbringung nur zur Verrechnung mit Jahresfehlbeträgen verwendet werden darf. Der Berechtigte ist von dem Antrag auf Investitionserlaubnis zu unterrichten. Sofern er im Rahmen eines Antrags nach § 6a die gleiche oder annähernd die gleiche Investitionsmaßnahme zusagt und deren Durchführung glaubhaft macht, ist die Investitionserlaubnis zu versagen. Der Anspruch auf Rückgabe entfällt mit der Bestandskraft der Investitionserlaubnis. Absatz 6 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Entfällt der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so hat der Berechtigte Anspruch auf Ersatz des Verkehrswerts des Unternehmens, das zurückzugeben gewesen wäre, im Zeitpunkt des Entfallens des Rückgabeanpruchs, sofern der Berechtigte nicht Entschädigung nach § 6 Abs. 7 verlangt.

(8) Die Anfechtungsklage gegen eine Entscheidung der Behörde nach Absatz 6 Satz 1 oder Absatz 7 Satz 1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 3a

Aussetzung der Verfügungsbeschränkung

(1) § 3 Abs. 3 bis 5 ist nicht anzuwenden, wenn eine öffentlich-rechtliche Gebietskörperschaft oder die Treuhandanstalt Verfügungsberechtigter über ein Grundstück, Gebäude oder Unternehmen ist und ein solcher Vermögenswert an einen Dritten oder einen Berechtigten für die nachstehend bezeichneten investiven Zwecke veräußert, vermietet oder verpachtet wird. Investive Zwecke liegen vor,

1. bei Grundstücken und Gebäuden, wenn die Veräußerung, Vermietung oder Verpachtung zur
 - a) Sicherung oder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insbesondere durch Errichtung einer gewerblichen Betriebsstätte oder eines Dienstleistungsunternehmens,
 - b) Deckung eines erheblichen Wohnbedarfs der Bevölkerung oder
 - c) Schaffung der für derartige Vorhaben erforderlichen Infrastrukturmaßnahmen
 erfolgt und wenn das Grundstück diesem Vorhaben dienen soll und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zu dem angestrebten Vorhaben steht;
2. bei Unternehmen, wenn die Veräußerung oder Verpachtung erfolgt,
 - a) um Arbeitsplätze zu schaffen oder zu sichern oder die Wettbewerbsfähigkeit verbessernde Investitionen zu ermöglichen oder
 - b) weil der Berechtigte keine Gewähr dafür bietet, daß er das Unternehmen fortführen wird.

Die Treuhandanstalt handelt bei Vermögenswerten, die im Eigentum eines ihrer Tochterunternehmen stehen, als gesetzlicher Vertreter. Sie haftet im Verhältnis zu ihrem Tochterunternehmen nur, wenn sie ohne dessen Zustimmung verfügt.

(2) Eine Veräußerung, Vermietung oder Verpachtung nach Absatz 1 ist zu unterlassen, wenn vor Abschluß des

Vertrags bestandskräftig entschieden ist, daß der Vermögenswert an den Berechtigten zurückzugeben ist, oder wenn der Berechtigte nach § 6a vorläufig in das Unternehmen eingewiesen worden ist.

(3)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die zuständige Behörde und ihr bekannte Berechtigte über die Absicht, zu veräußern, zu vermieten oder zu verpachten, zu unterrichten. Er hat dem Berechtigten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zu geben. Der Verfügungsberechtigte hat bei seiner Entscheidung über eine Veräußerung, Vermietung oder Verpachtung nach Absatz 1 zu berücksichtigen, ob ein der Behörde bekannter Berechtigter im Rahmen eines Antrags nach § 6a gleiche oder annähernd gleiche investive Maßnahmen zusagt wie der Dritte und deren Durchführung glaubhaft macht. Das Rückübertragungsverfahren wird nicht unterbrochen. Über die Entscheidung ist die Behörde zu unterrichten. Dem Berechtigten ist die Entscheidung zuzustellen.

(4)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gegen die Entscheidung des Verfügungsberechtigten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5) Is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Rückübertragung nicht möglich, weil er den Vermögenswert nach Absatz 1 veräußert hat, so kann der Berechtigte vo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Zahlung eines Geldbetrages in Höhe aller Geldleistungen aus der Veräußerung verlangen. Ist ein Erlös nicht erzielt worden oder unterschreitet dieser den Verkehrswert nicht unwesentlich, den der Vermögensgegenstand im Zeitpunkt der Veräußerung hatte, so kann der Berechtigte Zahlung des Verkehrswertes verlangen.

(6) Bei Vermietung und Verpachtung ist § 1 a Abs. 5 des Investitionsgesetzes entsprechend anzuwenden.

(7) Der Vertrag ist nur wirksam, wenn er eine Verpflichtung des Erwerbers enthält, den Vermögenswert zurückzuübertragen, falls er die für die ersten zwei Jahre zugesagten Maßnahmen nicht durchführt oder hiervon wesentlich abweicht, es sei denn, daß dies auf zum Zeitpunkt des Vertragsabschlusses nicht voraussehbare dringende betriebliche Erfordernisse zurückzuführen ist. § 1 d Abs. 5 des Investitionsgesetzes ist entsprechend anzuwenden.

(8) Veräußerungen nach dieser Vorschrift bedürfen keiner Genehmigung nach der Grundstücksverkehrsverordnung; gegenüber dem Grundbuchamt genügt als Nachweis hierfür eine Bescheinigung des Verfügungsberechtigten.

(9) Die Vorschrift ist auf Verträge anzuwenden, die bis zum 31. Dezember 1992 abgeschlossen werden. Das Investitionsgesetz sowie § 3 Abs. 6 dieses Gesetzes sind auf Veräußerungen, Vermietungen und Verpachtungen, die nach dieser Vorschrift zulässig sind, für die Dauer ihrer Geltung nicht anzuwenden.

§ 4

Ausschluß der Rückübertragung

(1) Eine Rückübertragung des Eigentumsrechtes oder sonstiger Rechte an Vermögenswerten ist ausgeschlossen, wenn dies von der Natur der Sache her nicht mehr möglich ist.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ist ausgeschlossen, wenn und soweit der Geschäftsbetrieb eingestellt worden ist und die tatsäch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Wiederaufnahme des Geschäftsbetriebs nach vernünftiger kaufmännischer Beurteilung fehlen. Die Rückgabe des Unternehmens ist auch ausgeschlossen, wenn und soweit ein Unternehmen auf Grund folgender Vorschriften veräußert wurde:

- a)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DDR vom 25. Januar 1990 (GBl. I Nr. 4 S. 16),
- b) Beschluß zur Gründung der Anstalt zu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des Volkseigentums (Treuhandanstalt) vom 1. März 1990 (GBl. I Nr. 14 S. 107),
- c) Treuhandgesetz vom 17. Juni 1990 (GBl. I Nr. 33 S. 300),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9 des Gesetzes zur Beseitigung von Hemmnissen bei der Privatisierung von Unternehmen und zur Förderung von Investitionen vom 22. März 1991 (BGBl. I S. 766),
- d) Gesetz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privater Unternehmen und über Unternehmensbeteiligungen vom 7. März 1990 (GBl. I Nr. 17 S. 141).

Dies gilt nicht, wenn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3 vorliegen.

(2) Die Rückübertragung ist ferner ausgeschlossen, wenn natürliche Personen, Religionsgemeinschaften oder gemeinnützige Stiftungen in redlicher Weise an dem Vermögenswert Eigentum oder dingliche Nutzungsrechte erworben haben. Dies gilt bei Grundstücken und Gebäuden nicht, sofern das dem Erwerb zugrundeliegende Rechtsgeschäft nach dem 18. Oktober 1989 geschlossen worden ist und nach § 6 Abs. 1 und 2 der Anmeldeverordnung nicht hätte genehmigt werden dürfen.

(3) Als unredlich ist der Rechtserwerb in der Regel dann anzusehen, wenn er

- a) nicht in Einklang mit den zum Zeitpunkt des Erwerb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den allgemeinen Rechtsvorschriften, Verfahrensgrundsätzen und einer ordnungsgemäßen Verwaltungspraxis stand, und der Erwerber dies wußte oder hätte wissen müssen, oder
- b) darauf beruhte, daß der Erwerber durch Korruption oder Ausnutzung einer persönlichen Machtstellung auf den Zeitpunkt oder die Bedingungen des Erwerbs oder auf die Auswahl des Erwerbsgegenstandes eingewirkt hat, oder
- c) davon beeinflußt war, daß sich der Erwerber eine von ihm selbst oder von dritter Seite herbeigeführte Zwangslage oder Täuschung des ehemaligen Eigentümers zu Nutze gemacht hat.

§ 5

Ausschluß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1) Ein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ist gemäß § 4 Abs. 1 insbesondere auch dann ausgeschlossen, wenn Grundstücke und Gebäude

- a) mit erheblichem baulichen Aufwand in ihrer Nutzungsart oder Zweckbestimmung verändert wurden und ein öffentliches Interesse an dieser Nutzung besteht,
- b) dem Gemeingebrauch gewidmet wurden,

- c) im komplexen Wohnungsbau oder Siedlungsbau verwendet wurden,
- d) der gewerblichen Nutzung zugeführt oder in eine Unternehmenseinheit einbezogen wurden und nicht ohne erhebliche Beeinträchtigung des Unternehmens zurückgegeben werden können.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Buchstabe a und d ist di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nur dann ausgeschlossen, wenn die maßgeblichen tatsächlichen Umstände am 29. September 1990 vorgelegen haben.

§ 6

Rückübertragung von Unternehmen

(1) Ein Unternehmen ist auf Antrag an den Berechtigten zurückzugeben, wenn e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technischen Fortschritts und der allgemein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mit dem enteigneten Unternehmen im Zeitpunkt der Enteignung vergleichbar ist; der Anspruch auf Rückgabe von Anteils- oder Mitgliedschaftsrechten richtet sich gegen die in § 2 Abs. 3 bezeichneten Inhaber dieser Rechte, der Anspruch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gegen den dort bezeichneten Verfügungsberechtigten. Im Zeitpunkt der Rückgabe festzustellend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en oder wesentliche Verbesserungen der Vermögens- oder Ertragslage sind auszugleichen; Schuldner bei wesentlicher Verschlechterung oder Gläubiger bei wesentlicher Verbesserung ist die Treuhandanstalt oder eine andere in § 24 Abs. 1 Satz 1 des D-Markbilanzgesetzes bezeichnete Stelle, wenn sie unmittelbar oder mittelbar a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beteiligt ist. Das Unternehmen ist mit dem enteigneten Unternehmen vergleichbar, wenn das Produkt- oder Leistungsangebot des Unternehmen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technischen und wirtschaftlichen Fortschritts im Grundsatz unverändert geblieben ist oder frühere Produkte oder Leistungen durch andere ersetzt worden sind. Ist das Unternehmen mit einem oder mehreren anderen Unternehmen zusammengefaßt worden, so kommt es für die Vergleichbarkeit nur auf diesen Unternehmensteil an.

(1a) Berechtigter bei der Rückgabe oder Rückführung eines Unternehmens nach §§ 6, 12 ist derjenige, dessen Vermögenswerte von Maßnahmen gemäß § 1 betroffen sind. Dieser besteht unter seiner Firma, die vor der Schädigung im Register eingetragen war, als in Auflösung befindlich fort, wenn er oder seine Gesellschafter oder seine Mitglieder oder Rechtsnachfolger dieser Personen, die mehr als fünfzig vom Hundert d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auf sich vereinen, einen Anspruch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oder von Anteilen oder Mitgliedschaftsrechten des Rückgabeberechtigten angemeldet haben. Kommt das erforderliche Quorum für das Fortbestehen eines Rückgabeberechtigten unter seiner alten Firma nicht zustande, kann das Unternehmen nicht zurückgefordert werden. Satz 2 gilt nicht für Gesellschaften, die ihr im Beitrittsgebiet belegenes Vermögen verloren haben und hinsichtlich des außerhalb dieses Gebiets belegenen Vermögens als Gesellschaft oder Stiftung werbend tätig sind; in diesem Falle ist Berechtigter nur die Gesellschaft oder Stiftung.

(2)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der Vermögenslage liegt vor,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Eröffnungsbilanz zum 1. Juli 1990 nach dem D-Markbilanzgesetz oder der für die Rückgabe aufgestellten Schlußbilanz

eine Überschuldung oder eine Unterdeckung des für die Rechtsform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kapitals ergibt. In diesem Falle stehen dem Unternehmen die Ansprüche nach den §§ 24, 26 Abs. 3, § 28 des D-Markbilanzgesetzes zu; diese Ansprüche dürfen nicht abgelehnt werden. Im Falle des § 28 des D-Markbilanzgesetzes ist das Kapitalwertungskonto vom Verpflichteten zu tilgen. Der Anspruch nach Satz 2 entfällt, soweit nachgewiesen wird, daß die Eigenkapitalverhältnisse im Zeitpunkt der Enteignung nicht günstiger waren. Der Verfügungsberechtigte kann den Anspruch nach Satz 2 auch dadurch erfüllen, daß er das erforderliche Eigenkapital durch Erlaß oder Übernahme von Schulden schafft. Die D-Markeröffnungsbilanz ist zu berichtigen, wenn sich die Ansprüche nach den §§ 24, 26 Abs. 3, § 28 des D-Markbilanzgesetzes auf Grund des Vermögensgesetzes der Höhe nach ändern.

(3) Eine wesentliche Verbesserung der Vermögenslage liegt vor, wenn sich bei der Aufstellung der D-Markeröffnungsbilanz nach dem D-Markbilanzgesetz oder der für die Rückgabe aufgestellten Schlußbilanz eine Ausgleichsverbindlichkeit nach § 25 des D-Markbilanzgesetzes ergibt und nachgewiesen wird, daß das Unternehmen im Zeitpunkt der Enteignung im Verhältnis zur Bilanzsumme ein geringeres Eigenkapital hatte; bei der Berechnung der Ausgleichsverbindlichkeit sind dem Berechtigten, seinen Gesellschaftern oder Mitgliedern entzogene Vermögensgegenstände höchstens mit dem Wert anzusetzen, der ihnen ausgehend vom Zeitwert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Wertabschläge nach dem D-Markbilanzgesetz zukommt. Ein geringeres Eigenkapital braucht nicht nachgewiesen zu werden, soweit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dem Wertansatz von Grund und Boden oder Bauten, die zu keinem Zeitpunkt im Eigentum des Berechtigten, sein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standen, entspricht. Eine nach § 25 Abs. 1 des D-Markbilanzgesetzes entstandene Ausgleichsverbindlichkeit entfällt, soweit eine wesentliche Verbesserung nicht auszugleichen ist.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ist zu erlassen oder in eine Verbindlichkeit nach § 16 Abs. 3 des D-Markbilanzgesetzes umzuwandeln, soweit das Unternehmen sonst nicht kreditwürdig ist. Die D-Markeröffnungsbilanz ist zu berichtigen, wenn sich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 auf Grund dieses Gesetzes der Höhe nach ändert.

(4) Eine wesentliche Veränderung der Ertragslage liegt vor, wenn die für das nach dem am 1. Juli 1990 beginnende Geschäftsjahr zu erwartenden Umsätze in Einheiten der voraussichtlich absetzbaren Produkte oder Leistun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llgemein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wesentlich höher oder niedriger als im Zeitpunkt der Enteignung sind. Müssen neue Produkte entwickelt werden, um einen vergleichbaren Umsatz zu erzielen, so besteht in Höhe der notwendigen Entwicklungskosten ein Erstattungsanspruch, es sei denn, das Unternehmen ist nicht sanierungsfähig. Ist der Umsatz wesentlich höher als im Zeitpunkt der Enteignung, insbesondere wegen der Entwicklung neuer Produkte, so entsteht in Höhe der dafür notwendigen Entwicklungskosten, soweit diese im Falle ihrer Aktivierung noch nicht abgeschrieben wären, eine Ausgleichsverbindlichkeit, es sei denn, daß dadurch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der Vermögenslage nach Absatz 2 eintreten würde.

(5) Die Rückgabe der enteigneten Unternehmen an die Berechtigten erfolgt durch Übertragung der Rechte, die dem Eigentümer nach der jeweiligen Rechtsform zuste-

hen. Ist das zurückzugebende Unternehmen mit einem oder mehreren anderen Unternehmen zu einer neuen Unternehmenseinheit zusammengefaßt worden, so sind, wenn das Unternehmen nicht entflochten wird, Anteile in dem Wert auf den Berechtigten zu übertragen, der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Absätze 1 bis 4 im Falle einer Entflechtung dem Verhältnis des Buchwertes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zum Buchwert des Gesamtunternehmens entspricht. Die Entflechtung kann nicht verlangt werden, wenn dies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teressen aller Betroffenen einschließlich der Berechtigten wirtschaftlich nicht vertretbar ist; dies ist insbesondere der Fall, wenn durch die Entflechtung Arbeitsplätze in erheblichem Umfang verlorengehen würden. Verbleiben Anteile bei der Treuhandanstalt, insbesondere zum Ausgleich wesentlicher Werterhöhungen, so können diese von den Anteilseignern erworben werden, denen Anteilsrechte nach diesem Gesetz übertragen worden sind.

(5a)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auf Rückgabe kann die Behörde anordnen, daß

- a)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a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auf den Berechtigten übertragen werden oder
- b) das gesamte Vermögen einschließlich der Verbindlichkeiten oder eine Betriebsstätte des Verfügungsberechtigten auf den Berechtigten einzeln oder im Wege der Gesamtrechtsnachfolge übertragen werden oder
- c)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a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auf die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im Verhältnis ihr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übertragen werden.

Wird der Anspruch auf Rückgabe nach Satz 1 Buchstabe c erfüllt, so haftet jeder Gesellschafter oder jedes Mitglied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für vor der Rückgabe entstandene Verbindlichkeiten des Berechtigten bis zur Höhe des Wertes seines Anteils oder Mitgliedschaftsrechts; im Verhältnis zueinander sind die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zur Ausgleichung nach dem Verhältnis des Umfangs ihr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verpflichtet.

(5b) Zur Erfüllung des Anspruchs eines Gesellschafters oder Mitglieds eines Berechtigten oder ihrer Rechtsnachfolger auf Rückgabe entzogener Anteile oder auf Wiederherstellung einer Mitgliedschaft können diese verlangen, daß die Anteile an sie übertragen werden und ihre Mitgliedschaft wiederhergestellt wird; das Handels- oder Genossenschaftsregister ist durch Löschung eines Lösungsvermerks oder Wiederherstellung der Eintragung zu berichtigen. Mit der Rückgabe des Unternehmens in einer der vorbezeichneten Formen sind auch die Ansprüche der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des Berechtigten und ihrer Rechtsnachfolger wegen mittelbarer Schädigung erfüllt.

(5c) Hat ein Berechtigter staatlichen Stellen eine Beteiligung, insbesondere wegen Kreditverweigerung oder der Erhebung von Steuern oder Abgaben mit enteignendem Charakter, eingeräumt, so steht diese den Gesellschaftern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n zu, es sei denn, daß die Voraussetzungen des § 1 Abs. 3 nicht vorliegen. Die Gesellschafter oder deren Rechtsnachfolger können verlangen, daß die staatliche Beteiligung gelöscht oder auf sie übertragen wird. Die beim Erwerb der Beteiligung erbrachte Einlage oder Vergütung ist im Verhältnis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und von den Gesellschaftern oder deren Rechtsnachfolgern an den Inhaber der Beteiligung zurückzuzahlen, soweit dieser Betrag den Wert der Beteiligung nach § 11 Abs. 1 Satz 1 des D-Markbilanzgesetzes nicht übersteigt. Nach früherem Recht gebildete Fonds, die weder auf Einzahlungen zurückzuführen noch Rückstellungen im Sinne des § 249 Abs. 1 des Handelsgesetzbuchs sind, werden, soweit noch vorhanden, dem Eigenkapital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zugerechnet. Ist eine Beteiligung im Sinne des Satzes 1 zurückgekauft worden, so kann der Berechtigte vom Kaufvertrag zurücktreten und die Löschung oder Rückübertragung nach Satz 1 bis 4 verlangen.

(6) Der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kann von jedem Gesellschafter, Mitglied oder einem Rechtsnachfolger und dem Rückgabeberechtigten gestellt werden. Der Antrag des Berechtigten gilt als zugunsten aller Berechtigten, denen der gleiche Anspruch zusteht, erhoben. Statt der Rückgabe kann die Entschädigung gewählt werden, wenn kein Berechtigter einen Antrag auf Rückgabe stellt. Sind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schon vor dem Zeitpunkt der Schädigung des Berechtigten entzogen worden, so gilt der Antrag des ehemaligen Inhabers der Anteile oder der Mitgliedschaftsrechte oder seines Rechtsnachfolgers auf Rückgabe sein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gleichzeitig als Antrag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und gilt sein Antrag auf Rückgabe des Unternehmens gleichzeitig als Antrag auf Rückgabe der Anteile oder Mitgliedschaftsrechte.

(6a) Ist die Rückgabe nach § 4 Abs. 1 Satz 2 ganz oder teilweise ausgeschlossen, so kann der Berechtigte die Rückgabe derjenigen Vermögensgegenstände verlangen, die sich im Zeitpunkt der Schädigung in seinem Eigentum befanden oder an deren Stelle getreten sind. Diesem Anspruch gehen jedoch Ansprüche von Gläubigern des Verfügungsberechtigten vor, soweit diese nicht unmittelbar oder mittelbar dem Bund, Ländern, Gemeinden oder einer anderen juristischen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zustehen. § 9 Abs. 2 Satz 1 ist entsprechend anzuwenden, wenn ein Grundstück nicht zurückgegeben werden kann. Ist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Rückgabe nicht möglich, weil er das Unternehmen oder nach Satz 1 zurückzugebende Vermögensgegenstände ganz oder teilweise veräußert hat oder das Unternehmen nach Absatz 1a Satz 3 nicht zurückgefordert werden kann, so können die Berechtigten vo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Zahlung eines Geldbetrages in Höhe des ihrem Anteil entsprechenden Erlöses aus der Veräußerung verlangen, sofern sie sich nicht für die Entschädigung nach Absatz 7 entscheiden. Ist ein Erlös nicht erzielt worden oder unterschreitet dieser den Verkehrswert, den das Unternehmen oder nach Satz 1 zurückzugebende Vermögensgegenstände im Zeitpunkt der Veräußerung hatten, so können die Berechtigten Zahlung des Verkehrswerts verlangen. Ist die Gesamtvollstreckung eines Unternehmens entgegen § 3 Abs. 3 Satz 6 und 7 nicht abgewendet worden, so können die Berechtigten Zahlung des Verkehrswerts der einzelnen Vermögensgegenstände abzüglich der nach Satz 2 zu berücksichtigenden Schulden in Höhe des ihrem Anteil entsprechenden Betrags verlangen.

(7) Ist die Rückgabe nach Absatz 1 Satz 1 nicht möglich oder entscheidet sich der Berechtigte für eine Entschädigung, so ist der Wert des Unternehmens zum Zeitpunkt der Übernahme in Volkseigentum oder in staatliche Ver-

waltung in Deutscher Mark zu erstatten. Ein damals erhaltener Kaufpreis oder Ablösungsbetrag ist im Verhältnis zwei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einer Deutschen Mark umzurechnen und vom Betrag der Entschädigung abzusetzen. Leistungen nach Absatz 6a werden auf einen verbleibenden Entschädigungsanspruch voll angerechnet.

(8) Ist in den Fällen des § 1 Abs. 1 Buchstabe d die Rückgabe i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s Gesetzes bereits erfolgt, so kann der Berechtigte verlangen, daß die Rückgabe nach d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überprüft und an dessen Bedingungen angepaßt wird.

(9)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wird ermächtig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und dem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as Verfahren und die Zuständigkeit der Behörden oder Stellen für die Durchführung der Rückgabe und Entschädigung von Unternehmen und Beteiligungen zu regeln sowie Vorschriften über die Berechnung der Veränderungen der Vermögens- und Ertragslage der Unternehmen und deren Bewertung zu erlassen.

(10) Das Gericht am Sitz des Rückgabeberechtigten hat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a Satz 2 auf Antrag Abwickler zu bestellen. Vor der Eintragung der Auflösung des Rückgabeberechtigten und seiner Abwickler ist ein im Register zu dem Berechtigten eingetragener Lösungsvermerk von Amts wegen zu löschen. Sind Registereintragungen zu dem Berechtigten nicht mehr vorhanden, so haben die Abwickler ihn, wenn er nach Absatz 1a Satz 2 fortbesteht, als in Auflösung befindlich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anzumelden. Im übrigen ist für die Abwicklung das jeweils für den Berechtigten geltende Recht anzuwenden. Die Fortsetzung des Berechtigten kann beschlossen werden, solange noch nicht mit der Verteilung des zurückzugebenden Vermögens an die Gesellschafter oder Mitglieder begonnen ist. Einer Eintragung oder Löschung im Register bedarf es nicht, wenn die zur Stellung des Antrags berechtigten Personen beschließen, daß der Berechtigte nicht fortgesetzt und daß in Erfüllung des Rückgabeanspruchs unmittelbar an die Gesellschafter des Berechtigten oder deren Rechtsnachfolger geleistet wird.

§ 6a

Vorläufige Einweisung

(1) Die Behörde hat Berechtigte nach § 6 auf Antrag vorläufig in den Besitz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einzuweisen, wenn die Berechtigung nachgewiesen ist und kein anderer Berechtigter nach § 3 Abs. 2 Vorrang hat. Wird die Berechtigung nur glaubhaft gemacht, erfolgt die vorläufige Einweisung, wenn

1. keine Anhaltspunkte dafür bestehen, daß die Berechtigten oder die zur Leitung des Unternehmens bestellten Personen die Geschäftsführung nicht ordnungsgemäß ausführen werden, und
2. im Falle der Sanierungsbedürftigkeit die Berechtigten über einen erfolversprechenden Plan verfügen.

(2) Die nach § 25 zuständige Behörde entscheidet über die Einweisung durch Bescheid nach § 33 Abs. 3 innerhalb von drei Monate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1 gilt die Einweisung nach Ablauf der Genehmigungsfrist als bewilligt. Die Anfechtungsklage gegen eine Entscheidung

der Behörde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 Auf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Berechtigten und dem Verfügungsberechtigten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en Pachtvertrag entsprechend anzuwenden, sofern sich der Berechtigte im Falle des Absatzes 1 Satz 1 nicht für einen Kauf entscheidet. Die Behörde hat auf Antrag für den Fall, daß dem Antrag der Berechtigten auf Rückgabe des entzogenen Unternehmens nicht stattgegeben wird, den Pachtzins oder den Kaufpreis zu bestimmen. Der Pachtzins oder der Kaufpreis bleiben bis zur bestandskräftigen Entscheidung über die Rückgabe gestundet; sie entfallen, wenn das Unternehmen an den Berechtigten zurückübertragen wird. Der Berechtigte hat dafür einzustehen, daß er und die zur Leitung des Unternehmens bestellten Personen bei der Führung der Geschäfte die Sorgfalt eines ordentlichen und gewissenhaften Geschäftsleiters anwenden.

(3) Der Berechtigte hat Anspruch darauf, daß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nach § 6 Abs. 2 und 4 bereits im Zeitpunkt der vorläufigen Einweisung ausgeglichen wird, soweit das Unternehmen sonst nicht fortgeführt werden könnte. Der Verpflichtete kann die Fortführung des Unternehmens auch in anderer Form, insbesondere durch Bürgschaft, gewährleisten.

(4) Einer Entscheidung der Behörde bedarf es nicht, wenn der Berechtigte und der Verfügungsberechtigte eine vorläufige Nutzung des zurückzugebenden Unternehmens vereinbaren. Die Vereinbarung ist der Behörde mitzuteilen.

§ 6b

Entflechtung

(1) Ein Unternehmen kann zur Erfüllung eines oder mehrerer Ansprüche auf Rückgabe nach § 6 in rechtlich selbständige Unternehmen oder in Vermögensmassen (Betriebsstätten) ganz oder teilweise entflochten werden. § 6 Abs. 1 bis 4 ist auf jede so gebildete Vermögensmasse gesondert anzuwenden. Über die Entflechtung entscheidet die zuständige Behörde auf Antrag der Berechtigten oder des Verfügungsberechtigten durch Bescheid nach § 33 Abs. 3. Der Antragsteller hat der Behörde nachzuweisen, daß er den Antrag auf Entflechtung auch dem zuständigen Betriebsrat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zur Unterrichtung zugeleitet hat.

(2) Die Entflechtung eines Unternehmens ist antragsgemäß zu verfügen, wen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die Anteils- oder Mitgliedschaftsrechte allein zustehen und die Berechtigten zustimmen. Bei der Entflechtung von Genossenschaften ist antragsgemäß zu entscheiden, wenn deren Abwickler oder, falls solche nicht bestellt sind, die Generalversammlung mit der für die Auflösung der Genossenschaft erforderlichen Mehrheit der Entflechtung zustimmen. In allen anderen Fällen entscheidet die Behörde nach pflichtgemäßem Ermessen.

(3) Der Behörde ist auf Verlangen die Schlußbilanz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einschließlich des dazu gehörenden Inventars für einen Zeitpunkt vorzulegen, der nicht länger als drei Monate zurückliegt. In der Schlußbilanz und im Inventar sind die Beträge aus der D-Markeröffnungsbilanz und dem dazu gehörenden Inventar jeweils anzugeben.

(4) Das Übergabeprotokoll nach § 33 Abs. 4 muß mindestens folgende Angaben enthalten:

1. den Namen oder die Firma und den Sitz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und der Personen, auf wel-

che die durch die Entflechtung entstehenden Unternehmen, die hinsichtlich ihrer Betriebe und Betriebsteile sowie der Zuordnung der Arbeitsverhältnisse genau zu beschreiben sind, übergehen, sowie deren gesetzliche Vertreter;

2. den Zeitpunkt, von dem an neu geschaffene Anteile oder eine neu geschaffene Mitgliedschaft einen Anspruch auf einen Anteil an dem Bilanzgewinn gewähren, sowie alle Besonderheiten in bezug auf diesen Anspruch;
3. den Zeitpunkt, von dem an die Handlungen des übertragenden Unternehmens als für Rechnung jedes der übernehmenden Personen vorgenommen gelten;
4. die genaue Beschreibung und Aufteilung der Gegenstände des Aktiv- und Passivvermögens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auf die verschiedenen Unternehmen oder Vermögensmassen. Soweit für die Übertragung von Gegenständen im Falle der Einzelrechtsnachfolge in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eine besondere Art der Bezeichnung bestimmt ist, sind diese Regelungen auch hier anzuwenden. Bei Grundstücken ist § 28 der Grundbuchordnung zu beachten. Im übrigen kann auf Urkunden wie Bilanzen und Inventare Bezug genommen werden, deren Inhalt eine Zuweisung des einzelnen Gegenstands ermöglicht;
5. die Ausgleichsforderung, Ausgleichsverbindlichkeit oder Garantien, die jeder einzelnen Vermögensmasse zugeordnet werden sollen.

(5) Muß für die Zwecke der Rückgabe ein neues Unternehmen errichtet werden, so sind die für die jeweilige Rechtsform maßgeblichen Gründungs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Einer Gründungsprüfung bedarf es nicht; die Prüfungsaufgaben des Registergerichts obliegen insoweit der zuständigen Behörde. Die D-Markeröffnungsbilanz des zu entflechtenden Unternehmens ist entsprechend der Bildung der neuen Vermögensmassen aufzuteilen; sie gilt mit dem Wirksamwerden der Entflechtung im Sinne der Aufteilung als berichtigt.

(6) Kann ein Gläubiger des übertragenden Unternehmens von der Person, der die Verbindlichkeit im Rahmen der Vermögensaufteilung zugewiesen worden ist, keine Befriedigung erlangen, so haften auch die anderen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Personen für diese Verbindlichkeit als Gesamtschuldner. Ist eine Verbindlichkeit keiner der neuen Vermögensmassen zugewiesen worden und läßt sich die Zuweisung auch nicht durch Auslegung ermitteln, so haften die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Personen als Gesamtschuldner. Eine Haftung tritt nicht ein, wenn die Behörde festgelegt hat, daß für die Erfüllung von Verbindlichkeiten nur bestimmte Personen, auf die Unternehmen oder Betriebsstätten übertragen worden sind, oder die Treuhandanstalt einzustehen hat. Die Treuhandanstalt haftet nur bis zu dem Betrag, den die Gläubiger erhalten hätten, wenn die Entflechtung nicht durchgeführt worden wäre.

(7) Mit der Unanfechtbarkeit des Bescheids nach § 33 Abs. 3 gehen je nach Entscheidung der Behörde die im Übergabeprotokoll bezeichneten Gegenstände entsprechend der dort vorgesehenen Aufteilung entweder einzeln oder jeweils als Gesamtheit auf die bezeichneten Personen über. Gleichzeitig gehen die Anteilsrechte auf die im Bescheid bezeichneten Personen über. Das übertragende Unternehmen erlischt, sofern es nach dem Bescheid nicht

fortbestehen soll. Stellt sich nachträglich heraus, daß Gegenstände oder Verbindlichkeiten nicht übertragen worden sind, so sind sie von der Behörde den im Bescheid bezeichneten Personen nach denselben Grundsätzen zuzuteilen, die bei der Entflechtung angewendet worden sind, soweit sich aus der Natur der Sache keine andere Zuordnung ergibt.

(8) Die Behörde ersucht die für die im Entflechtungsbescheid bezeichneten Personen zuständigen Registergerichte und die für die bezeichneten Grundstücke zuständigen Grundbuchämter um Berichtigung der Register und Bücher und, soweit erforderlich, um Eintragung.

(9) Im Falle der Entflechtung bleibt der Betriebsrat im Amt und führt die Geschäfte für die ihm bislang zugeordneten Betriebsteile weiter, soweit sie über die in § 1 des Betriebsverfassungsgesetzes genannte Arbeitnehmerzahl verfügen und nicht in einen Betrieb eingegliedert werden, in dem ein Betriebsrat besteht. Das Übergangsmandat endet, sobald in den Betriebsteilen ein neuer Betriebsrat gewählt und das Wahlergebnis bekanntgegeben ist, spätestens jedoch drei Monate nach Wirksamwerden der Entflechtung des Unternehmens. Werden Betriebsteile, die bislang verschiedenen Betrieben zugeordnet waren, zu einem Betrieb zusammengefaßt, so nimmt der Betriebsrat, dem der nach der Zahl der wahlberechtigten Arbeitnehmer größte Betriebsteil zugeordnet war, das Übergangsmandat wahr. Satz 3 gilt entsprechend, wenn Betriebe zu einem neuen Betrieb zusammengefaßt werden. Stehen die an der Entflechtung beteiligten Unternehmen im Wettbewerb zueinander, so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ie Beteiligungsrechte des Betriebsrats nicht anzuwenden, soweit sie Angelegenheiten betreffen, die den Wettbewerb zwischen diesen Unternehmen beeinflussen können.

§ 7

Wertausgleich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Vermögenswerten – außer in den Fällen des § 6 – sind die seit dem Übergang in Volkseigentum aus Mitteln des Staatshaushaltes finanzierten Werterhöhungen sowie die eingetretenen Wertminderungen festzustellen und auszugleichen. Für die Feststellung von Wertveränderungen gelten die bewertungsrechtlichen Vorschriften.

§ 8

Wahlrecht

(1) Soweit den Berechtigten ei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gemäß § 3 zusteht, können sie statt dessen Entschädigung wählen. Ausgenommen sind Berechtigte, deren Grundstücke durch Eigentumsverzicht, Schenkung oder Erbausschlagung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2) Liegt die Berechtigung bei einer Personenmehrheit, kann das Wahlrecht nur gemeinschaftlich ausgeübt werden.

§ 9

Grundsätze der Entschädigung

(1) In den Fällen des § 4 Abs. 1 und 2 wird eine Entschädigung in Geld gewährt. Für Grundstücke im Sinne des § 1 Abs. 2, die durch Eigentumsverzicht, Schenkung oder Erbausschlagung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wird keine Entschädigung gewährt.

(2) Kann ein Grundstück aus den Gründen des § 4 Abs. 2 nicht zurückübertragen werden, kann die Entschädigung durch Übereignung von Grundstücken mit möglichst vergleichbarem Wert erfolgen. Ist dies nicht möglich, ist ebenfalls in Geld zu entschädigen. Für die Bereitstellung von Ersatzgrundstücken gilt § 21 Abs. 3 Satz 1 und Abs. 4 entsprechend.

(3) Das Nähere regelt ein Gesetz.

§ 10

Bewegliche Sachen

(1) Wurden bewegliche Sachen verkauft und können sie gemäß § 3 Abs. 3 und § 4 Abs. 2 und 3 nicht zurückgegeben werden, steht dem Berechtigten ein Anspruch in Höhe des erzielten Erlöses gegen den Entschädigungsfonds zu, sofern ihm der Erlös nicht bereits auf einem Konto gutgeschrieben oder ausgezahlt wurde.

(2) Wurde bei der Verwertung einer beweglichen Sache kein Erlös erzielt, hat der Berechtigte keinen Anspruch auf Entschädigung.

Abschnitt III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 11

Grundsatz

(1) Die staatliche Verwaltung über Vermögenswerte wird auf Antrag des Berechtigten durch Entscheidung der Behörde aufgehoben. Der Berechtigte kann statt dessen unter Verzicht auf sein Eigentum Entschädigung nach § 9 wählen.

(2) Hat der Berechtigte seinen Anspruch bis zum Ablauf der Anmeldefrist (§ 3 der Anmeldeverordnung) nicht angemeldet, ist der staatliche Verwalter berechtigt, über den verwalteten Vermögenswert zu verfügen. Die Verfügung über den Vermögenswert ist nicht mehr zulässig, wenn der Berechtigte seinen Anspruch am verwalteten Vermögen nach Ablauf der Frist angemeldet hat.

(3) Der Verwalter hat sich vor einer Verfügung zu vergewissern, daß keine Anmeldung im Sinne der Anmeldeverordnung vorliegt.

(4) Dem Berechtigten steht im Falle der Verfügung der Verkaufserlös zu. Wird von dem Berechtigten kein Anspruch angemeldet, ist der Verkaufserlös an die für den Entschädigungsfonds zuständige Behörde zur Verwaltung abzuführen.

(5) Soweit staatlich verwaltete Geldvermögen auf Grund von Vorschriften diskriminierenden oder sonst benachteiligenden Charakters gemindert wurden, ist ein Ausgleich vorzusehen. Das Nähere regelt ein Gesetz.

§ 12

Staatlich verwaltete Unternehmen und Unternehmensbeteiligungen

Die Modalitäten der Rückführung staatlich verwalteter Unternehmen und Unternehmensbeteiligungen richten sich nach § 6. Anstelle des Zeitpunktes der Enteignung gilt der Zeitpunkt der Inverwaltungnahme.

§ 13

Haftung des staatlichen Verwalters

(1) Ist dem Berechtigten des staatlich verwalteten Vermögenswertes durch eine gröbliche Verletzung der Pflichten, die sich aus einer ordnungsgemäßen Wirtschaftsführung ergeben,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oder infolge Verletzung anderer dem staatlichen Verwalter obliegenden Pflichten während der Zeit der staatlichen Verwaltung rechtswidrig ein materieller Nachteil entstanden, ist ihm dieser Schaden zu ersetzen.

(2) Der Schadensersatz ist auf der Grundlage der gesetzlichen Regelungen der Staatshaftung festzustellen und aus dem Entschädigungsfonds zu zahlen.

(3) Dem Entschädigungsfonds steht gegenüber dem staatlichen Verwalter oder der ihm übergeordneten Kommunalverwaltung ein Ausgleichsanspruch zu.

§ 14

(1) Dem Berechtigten stehen keine Schadensersatzansprüche zu, wenn Vermögenswerte nicht in staatliche Verwaltung genommen wurden, weil das zuständige Staatsorgan keine Kenntnis vom Bestehen der sach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Begründ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oder vom Vorhandensein des Vermögenswertes hatte und unter Berücksichtigung der konkreten Umstände nicht erlangen konnte.

(2) Ei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besteht auch dann nicht, wenn dem Berechtigten bekannt war, daß die staatliche Verwaltung über den Vermögenswert nicht ausgeübt wird oder er diese Kenntnis in zumutbarer Weise hätte erlangen können.

§ 15

Befugnisse des staatlichen Verwalters

(1) Bis zu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ist die Sicherung und ordnungsgemäße Verwaltung des Vermögenswertes durch den staatlichen Verwalter wahrzunehmen.

(2) Der staatliche Verwalter ist bis zu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nicht berechtigt, ohne Zustimmung des Eigentümers langfristige vertragliche Verpflichtungen einzugehen oder dingliche Rechtsgeschäfte abzuschließen. § 3 Abs. 3 Satz 2 und 5 gilt entsprechend.

(3) Die Beschränkung gemäß Absatz 2 entfällt nach Ablauf der Anmeldefrist (§ 3 der Anmeldeverordnung), solange der Eigentümer seinen Anspruch auf den staatlich verwalteten Vermögenswert nicht angemeldet hat.

(4) Der staatliche Verwalter hat sich vor einer Verfügung zu vergewissern, daß keine Anmeldung im Sinne des Absatzes 3 vorliegt.

Abschnitt IV

**Rechtsverhältnisse
zwischen Berechtigten und Dritten**

§ 16

Übernahme von Rechten und Pflichten

(1) Mit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oder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sind die Rechte

und Pflichten, die sich aus dem Eigentum am Vermögenswert ergeben, durch den Berechtigten selbst oder durch einen vom Berechtigten zu bestimmenden Verwalter wahrzunehmen.

(2) Mit der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oder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oder mit der vorläufigen Einweisung nach § 6a tritt der Berechtigte in alle in bezug auf den jeweiligen Vermögenswert bestehenden Rechtsverhältnisse ein.

(3) Bestehende Rechtsverhältnisse können nur auf der Grundlage der jeweils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geändert oder beendet werden.

§ 17

Miet- und Nutzungsrechte

Durch die Rückübertragung vo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oder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werden bestehende Miet- oder Nutzungsrechtsverhältnisse nicht berührt. Dies gilt nicht in den Fällen des § 1 Abs. 3, wenn der Mieter oder Nutzer bei Abschluß des Vertrages nicht redlich im Sinne des § 4 Abs. 2 und 3 gewesen ist.

§ 18

Grundstücksbelastungen

(1) Bei der Rückübertragung von Grundstücken sind die dinglichen Belastungen, die im Zeitpunkt des Übergangs in Volkseigentum bestanden haben, wieder im Grundbuch einzutragen. Soweit der Begünstigte vom Staat bereits befriedigt worden ist, geht die zugrunde liegende Forderung auf den Entschädigungsfonds über. In diesem Falle ist auf Ersuchen der zuständigen Behörde eine Sicherungshypothek zugunsten des Entschädigungsfonds im Grundbuch einzutragen, sofern die Forderung nicht durch den Berechtigten vorher beglichen wird.

(2) Persönliche Forderungen aus Hypotheken, die zugunsten volkseigener Geld- oder Kreditinstitute begründet wurden und die nach Überführung des Grundstückes in Volkseigentum noch fortbestehen, erlöschen, wenn keine Rückübertragung des Grundstückes an den Berechtigten erfolgt. Dem Rechtsnachfolger des Geld- oder Kreditinstitutes ist ein Ausgleich aus dem Entschädigungsfonds zu gewähren.

(3) Aufbauhypotheken sind vom Berechtigten zu übernehmen, wenn eine der Kreditaufnahme entsprechende werterhöhende oder werterhaltende Baumaßnahme durchgeführt wurde.

§ 19

Sonstige Ansprüche Dritter an Grundstücken

(1) Mieter und Nutzer von Wohn-, Erholungs- und Geschäftsgrundstücken können Ansprüche aus von ihnen im Zusammenhang mit dem Grundstück getätigten Aufwendungen, deren Leistung nach d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dem Eigentümer obliegt oder für die eine Forderung auf Aufwendungs- bzw. Kostenerstattung, Wertersatz oder angemessene Entschädigung besteht, unabhängig von der Fälligkeit der Forderung anmelden.

(2) Die Anmeldung erfolgt im Rahmen des im Abschnitt VI geregelten Verfahrens.

(3) Erkennt der Berechtigte die Ansprüche an, soll darüber eine Vereinbarung abgeschlossen werden. Im Streitfall steht der Zivilrechtsweg offen.

(4) Di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oder die Rückübertragung wird davon nicht berührt.

§ 20

Vorkaufsrecht

(1) Mietern und Nutzern von Ein- und Zweifamilienhäusern sowie von Grundstücken für Erholungszwecke, die staatlich verwaltet sind oder auf die ein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besteht, wird auf Antrag ein Vorkaufsrecht am Grundstück eingeräumt.

(2) Bei Grundstücken, an denen Dritte Eigentums- oder dingliche Nutzungsrechte erworben haben, wird den Berechtigten auf Antrag ein Vorkaufsrecht am Grundstück eingeräumt.

(3) Anträge auf Eintragung des Vorkaufsrechts sind im Rahmen des Verfahrens nach Abschnitt VI zu stellen.

§ 21

Ersatzgrundstück

(1) Mieter oder Nutzer von Einfamilienhäusern und Grundstücken für Erholungszwecke, die staatlich verwaltet sind oder auf die ein rechtlich begründeter Anspruch auf Rückübertragung geltend gemacht wurde, können beantragen, daß dem Berechtigten ein Ersatzgrundstück zur Verfügung gestellt wird, wenn sie bereit sind, das Grundstück zu kaufen. Der Berechtigte ist nicht verpflichtet, ein Ersatzgrundstück in Anspruch zu nehmen.

(2) Anträgen nach § 9 Abs. 2 ist vorrangig zu entsprechen.

(3) Dem Antrag nach Absatz 1 Satz 1 ist zu entsprechen, wenn der Berechtigte einverstanden ist, ein in kommunalem Eigentum stehendes Grundstück im gleichen Stadt- oder Gemeindegebiet zur Verfügung steht und einer Eigentumsübertragung keine berechtigten Interessen entgegenstehen. Dies gilt insbesondere, wenn die Mieter und Nutzer erhebliche Aufwendungen zur Werterhöhung oder Werterhaltung des Objektes getätigt haben.

(4) Wertdifferenzen zwischen dem Wert des Ersatzgrundstückes und dem Wert des Grundstückes zum Zeitpunkt der Inverwaltungnahme oder des Entzuges des Eigentumsrechtes sind auszugleichen.

(5) Wurde dem Berechtigten eines staatlich verwalteten Grundstückes ein Ersatzgrundstück übertragen, ist der staatliche Verwalter berechtigt, das Grundstück an den Mieter oder Nutzer zu verkaufen.

Abschnitt V

Organisation

§ 22

Durchführung de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sowie die Aufgaben in bezug auf den zu bildenden Entschädigungsfonds werden

von den Ländern Mecklenburg-Vorpommern, Brandenburg,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und Berlin durchgeführt. Bei Entscheidungen über die Gewährung eines Ersatzgrundstückes, über einen Wertausgleich oder über eine Entschädigung geschieht dies im Auftrag des Bundes.

§ 23

Landesbehörden

Die Länder errichten Ämter und Landesä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24

Untere Landesbehörden

Für jeden Landkreis, jede kreisfreie Stadt und für Berlin wird ein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ls untere Landesbehörde eingerichtet. Im Bedarfsfall kann ein solches Amt für mehrere Kreise als untere Landesbehörde gebildet werden.

§ 25

Obere Landesbehörden

Für jedes Land wird ein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gebildet. Für Maßnahmen nach § 3 Abs. 6 und 7, fü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nach § 6 und deren Entflechtung sowie für die vorläufige Einweisung nach § 6a ist das Landesamt ausschließlich zuständig.

§ 26

Widerspruchsausschüsse

(1) Bei jedem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wird ein Widerspruchsausschuß gebildet; bei Bedarf können mehrere Widerspruchsausschüsse gebildet werden. Der Ausschuß besteht aus einem Vorsitzenden und zwei Beisitzern.

(2) Der Widerspruchsausschuß entscheidet weisungsunabhängig mit Stimmenmehrheit über den Widerspruch.

§ 27

Amts- und Rechtshilfe

Alle Behörden und Gerichte haben den in diesem Abschnitt genannten Behörden unentgeltlich Amts- und Rechtshilfe zu leisten.

§ 28

Übergangsregelungen

(1) Bis zur Errichtung der unteren Landesbehörden werden die Aufgaben dieses Gesetzes von den Landratsämtern oder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wahrgenommen. Die auf der Grundlage der Anmeldeverordnung eingereichten Anmeldungen sind durch die Ä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nach deren Bildung von den Landratsämtern oder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zur weiteren Bearbeitung zu übernehmen.

(2) Die Länder können die Aufgaben der unteren Landesbehörden auch auf Dauer durch die Landratsämter oder die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wahrnehmen lassen.

§ 29

**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r Unterstützung der Gewährleistung einer einheitlichen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wird ein 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gebildet. Beim Bundesamt ist ein Beirat zu bilden, der aus je einem Vertreter der in § 22 bezeichneten Länder, vier Vertretern der Interessenverbände und aus vier Sachverständigen besteht.

§ 29a

Sondervermögen des Bundes

(1) Aufwendungen für eine Entschädigung, einen Wertausgleich oder ein Ersatzgrundstück nach den §§ 7 oder 9 werden von einem nicht rechtsfähigen Sondervermögen des Bundes erbracht.

(2) Das 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erwaltet das Sondervermögen auf Weisung und unter Aufsicht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3) Das Sondervermögen kann unter seinem Namen im rechtsgeschäftlichen Verkehr handeln, klagen und verklagt werden. Der allgemeine Gerichtsstand des Sondervermögens ist Berlin.

(4) Der Bund haftet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s Sondervermögens.

Abschnitt VI

Verfahrensregelungen

§ 30

Antrag

(1) Ansprüche nach diesem Gesetz sind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mittels Antrag geltend zu machen. Über den Antrag entscheidet die Behörde, wenn und soweit die Rückgabe zwischen dem Verfügungsberechtigten und dem Berechtigten nicht einvernehmlich zustande kommt. Der Antrag auf Rückgabe kann jederzeit zurückgenommen oder für erledigt erklärt werden. Er kann auch auf einzelne Verfahrensstufen beschränkt werden. Die Anmeldung nach der Anmeldeverordnung gilt als Antrag auf Rückübertragung oder auf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2) In den Fällen des § 6 Abs. 1 und des § 6 b können die Parteien beantragen, die Entscheidung oder bestimmte Entscheidungen statt durch die Behörde durch ein Schiedsgericht nach § 38 a treffen zu lassen. Die Behörde hat die Parteien auf diese Möglichkeit hinzuweisen, wenn nach ihren Ermittlungen Interessen Dritter durch die Entscheidung nicht berührt werden. Ein Antrag im Sinne des Satzes 1 kann auch noch gestellt werden, wenn das behördliche Verfahren bereits begonnen hat.

§ 31

Pflichten der Behörde

(1) Die Behörde ermittelt den Sachverhalt von Amts wegen, der Antragsteller hat hierbei mitzuwirken.

(2) Die Behörde hat die betroffenen Rechtsträger oder staatlichen Verwalter sowie Dritte, deren rechtliche Inter-

essen durch den Ausgang des Verfahrens berührt werden können, über die Antragstellung unter Übersendung einer Abschrift des Antrags und seiner Anlagen zu informieren und zu dem weiteren Verfahren hinzuzuziehen.

(3) Auf Verlangen hat der Antragsteller Anspruch auf Auskunft durch die Behörde über alle Informationen, die zur Durchsetzung seines Anspruches erforderlich sind. Hierzu genügt die Glaubhaftmachung des Anspruches. Die Auskunft ist schriftlich zu erteilen. Wird ein Antrag auf Rückgabe eines Unternehmens gestellt, so hat die Behörde dem Antragsteller, wenn er seine Berechtigung glaubhaft macht, zu gestatten, die Geschäftsräume des Unternehmens zu betreten und alle Unterlagen einzusehen, die für seinen Antrag Bedeutung haben können.

(4) Die Behörde ist berechtigt, vom Rechtsträger, derzeitigen Eigentümer, staatlichen Verwalter sowie weiteren mit der Verwaltung von Vermögenswerten Beauftragten umfassende Auskunft zu fordern.

(5) Die Behörde hat in jedem Stadium des Verfahrens auf eine gütliche Einigung zwischen dem Berechtigten und dem Verfügungsberechtigten hinzuwirken. Sie setzt das Verfahren aus, soweit ihr mitgeteilt wird, daß eine gütliche Einigung angestrebt wird. Kommt es zu einer Einigung, die den Anspruch des Berechtigten ganz oder teilweise erledigt, so ist die Einigung auf Antrag durch Bescheid nach § 33 Abs. 3 in Verbindung mit einem Übergabeprotokoll nach § 33 Abs. 4, § 6 b Abs. 4 festzustellen. Absatz 2 bleibt unberührt. Der Bescheid wird sofort bestandskräftig, wenn nicht der Widerruf innerhalb einer in dem Bescheid zu bestimmenden Frist, die höchstens einen Monat betragen darf, vorbehalten wird.

(6) Haben die Parteien einen Antrag nach § 30 Abs. 2 Satz 1 Halbsatz 1 gestellt, so gibt die Behörde dem Antrag statt, wenn Interessen Dritter im Sinne des Absatzes 2 nicht berührt sind. Die Behörde ist dem Schiedsgericht zur Auskunft über alle Informationen verpflichtet, die das Schiedsgericht für seine Entscheidung benötigt. Sie ist an die Entscheidung des Schiedsgerichts gebunden.

Entscheidung, Wahlrecht

§ 32

(1) Die Behörde hat dem Antragsteller die beabsichtigte Entscheidung schriftlich mitzuteilen und ihm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binnen eines Monats zu geben. Dabei ist er auf die Möglichkeit der Auskunftserteilung gemäß § 31 Abs. 3 sowie auf das Wahlrecht nach Absatz 2 hinzuweisen.

(2) Solange die Behörde noch nicht entschieden hat, kann der Antragsteller statt Rückübertragung des Vermögenswertes o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Entschädigung nach § 9 wählen. Dies gilt nicht in den Fällen des § 8 Abs. 1 Satz 2.

(3) Hat der Antragsteller Auskunft verlangt, kann die Behörde über den Antrag frühestens einen Monat, nachdem dem Antragsteller die Auskunft zugegangen ist, entscheiden.

(4) Entscheidungen und Mitteilungen nach diesem Abschnitt, die eine Frist in Lauf setzen, sind den in ihren Rechten Betroffenen zuzustellen.

§ 33

(1) Hat der Antragsteller Entschädigung gewählt, beschränkt sich die Entscheidung auf die Feststellung der Berechtigung und die Feststellung der Ausübung des Wahlrechtes; das weitere Verfahren regelt sich nach besonderen Vorschriften.

(2) Über Wertausgleichsansprüche gemäß § 7 und über Schadensersatzansprüche gemäß § 13 Abs. 2 und 3 und § 14 ist eine gesonderte Entscheidung zu treffen.

(3) Über die Entscheidung ist den Beteiligten ein schriftlicher Bescheid zu erteilen und zuzustellen. Der Bescheid ist zu begründen und mit einer Rechtsbehelfsbelehrung zu versehen.

(4) Mit der Entscheidung ist den Beteiligten ein Übergabeprotokoll zuzustellen. Dieses hat Angaben zum festgestellten Eigentums- und Vermögensstatus, zu getroffenen Vereinbarungen, zu angemeldeten Rechten im Sinne des § 19 sowie zu sonstigen wesentlichen Regelungen in bezug auf die zu übergebenden Vermögenswerte zu enthalten. Bei der Rückgabe von Unternehmen muß das Übergabeprotokoll die in § 6b Abs. 4 bezeichneten Angaben enthalten.

(5) Die Entscheidung wird einen Monat nach Zustellung bestandskräftig, wenn kein Widerspruch eingelegt wird.

§ 34

**Eigentumsübergang,
Grundbuchberichtigung
und Löschung von Vermerken
über die staatliche Verwaltung**

(1) Mit der Unanfechtbarkeit einer Entscheidung über di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oder sonstigen dinglichen Rechten gehen die Rechte auf den Berechtigten über.

(2) Bei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 oder sonstigen dinglichen 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beantragt die Behörde die Berichtigung des Grundbuchs bei der das Grundbuch führenden Behörde. Gebühren für die Grundbuchberichtigung werden nicht erhoben.

(3) Der Berechtigte ist von der Entrichtung der Grunderwerbsteuer befreit.

(4) Bei 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beantragt die Behörde bei der das Grundbuch führenden Behörde die Löschung des Vermerkes über die staatliche Verwaltung.

(5) Absatz 1 bis 4 ist auf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und deren Entflechtung anzuwenden, soweit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vorgesehen sind. Das Eigentum an einem Unternehmen oder einer Betriebsstätte geht im Wege der Gesamtrechtsnachfolge über.

§ 35

Örtliche Zuständigkeit

(1) Für die Entscheidung über Vermögenswerte in staatlicher Verwaltung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er Antragsteller, im Erbfall der betroffene Erblasser, seinen letzten Wohnsitz hatte. Das gilt auch für Vermögenswerte, die beschlagnahmt und in Volkseigentum übernommen wurden.

(2) In den übrigen Fällen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er Vermögenswert belegen ist.

(3) In den Fällen des § 3 Abs. 2 ist das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usschließlich zuständig, in dessen Bereich der Vermögenswert belegen ist. Das Amt, dessen Zuständigkeit zunächst nach Absatz 1 begründet war, gibt sein Verfahren dorthin ab.

(4) Ist der Antrag an ein örtlich unzuständiges Amt oder an eine andere unzuständige Stelle gerichtet worden, haben diese den Antrag unverzüglich an das zuständige 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abzugeben und den Antragsteller zu benachrichtigen.

§ 36

Widerspruchsverfahren

(1) Gegen Entscheidungen des Amtes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kann Widerspruch erhoben werden. Der Widerspruch ist innerhalb eines Monats nach Zustellung der Entscheidung schriftlich bei dem Amt zu erheben, das die Entscheidung getroffen hat. Der Widerspruch soll begründet werden. Wird dem Widerspruch nicht oder nicht in vollem Umfang abgeholfen, ist er dem zuständigen Widerspruchsausschuß zuzuleiten.

(2) Kann durch die Aufhebung oder Änderung der Entscheidung ein anderer als der Widerspruchsführer beschwert werden, so ist er vor Abhilfe oder Erlaß des Widerspruchsbescheids zu hören.

(3) Der Widerspruchsbescheid ist zu begründen, mit einer Rechtsmittelbelehrung zu versehen und zuzustellen.

(4) Gegen die Entscheidung des Landesamts nach § 25 Satz 2 findet ein Widerspruchsverfahren nicht statt.

§ 37

Zulässigkeit des Gerichtsweges

(1) Der Beschwerde kann gegen den Widerspruchsbescheid oder bei Ausschluß des Widerspruchsverfahrens nach § 36 Abs. 4 unmittelbar gegen den Bescheid der Behörde Antrag auf Nachprüfung durch das Gericht stellen.

(2) Die Berufung gegen ein Urteil und die Beschwerde gegen eine andere Entscheidung des Gerichts sind ausgeschlossen. Das gilt nicht für die Beschwerde gegen die Nichtzulassung der Revision nach § 135 in Verbindung mit § 133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die Beschwerde gegen Beschlüsse über den Rechtsweg nach § 17a Abs. 2 und 3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und die Beschwerde gegen Beschlüsse über den Antrag auf Anordnung der aufschiebenden Wirkung nach § 80 Abs. 5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Auf die Beschwerde gegen die Beschlüsse über den Rechtsweg findet § 17a Abs. 4 Satz 4 bis 6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entsprechende Anwendung.

§ 38

Kosten

(1) Das Verwaltungsverfahren einschließlich des Widerspruchsverfahrens ist kostenfrei.

(2) Die Kosten einer Vertretung trägt der Antragsteller. Die Kosten der Vertretung im Widerspruchsverfahren sind dem Widerspruchsführer zu erstatten, soweit die Zuziehung eines Bevollmächtigten zur zweckentsprechenden Rechtsverfolgung notwendig und der Widerspruch begründet war. Über die Tragung der Kosten wird bei der Entscheidung zur Sache mitentschieden.

§ 38a

Schiedsgericht; Schiedsverfahren

(1) Die Einsetzung eines Schiedsgerichts für Entscheidungen nach § 6 Abs. 1 oder die vorhergehende Entflechtung nach § 6b erfolgt auf Grund eines Schiedsvertrags zwischen den Parteien (Berechtigter und Verfügungsberechtigter). Das Schiedsgericht besteht aus einem Vorsitzenden und zwei Beisitzern, von denen jede Partei einen ernannt. Der Vorsitzende, der die Befähigung zum Richteramt haben muß, wird von den Beisitzern ernannt.

(2) Auf den Schiedsvertrag und das schiedsgerichtliche Verfahren finden die Vorschriften der §§ 1025 bis 1047 der

Zivilprozeßordnung Anwendung. § 31 Abs. 5 gilt entsprechend. Gericht im Sinne des § 1045 der Zivilprozeßordnung ist das nach § 37 zuständige Gericht. Die Niederlegung des Schiedsspruchs oder eines schiedsrichterlichen Vergleichs erfolgt bei der Behörde.

(3) Gegen den Schiedsspruch kann innerhalb von vier Wochen Aufhebungsklage bei dem nach Absatz 2 Satz 3 zuständigen Gericht erhoben werden. Wird die Aufhebungsklage innerhalb dieser Frist nicht erhoben oder ist sie rechtskräftig abgewiesen worden oder haben die Parteien nach Erlaß des Schiedsspruchs auf die Aufhebungsklage verzichtet oder liegt ein schiedsrichterlicher Vergleich vor, erläßt die Behörde einen Bescheid nach § 33 Abs. 3 Satz 1 in Verbindung mit einem Übergabeprotokoll nach § 33 Abs. 4, in dem der Inhalt des Schiedsspruchs oder des schiedsrichterlichen Vergleichs festgestellt wird; dieser Bescheid ist sofort bestandskräftig und hat die Wirkungen des § 34.

§ 39

(Außerkräfttreten anderer Vorschriften)

문서 번호 56

동독 기업의 인수 - 도이치뱅크가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한 사례

1991 년 4 월 30 일

담당자 / 기관: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Deutscher Bundestag, Fraktion der SPD i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AG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 사민당의 의원이 도이치뱅크에 의한 독일신용은행 인수사례에 관해 질의한 것에 연방 재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의원들은 도이치뱅크와 독일신용은행 간의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었는지에 관해서 밝히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이 도이치뱅크에 의해 인수될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이 독일신용은행을 인수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연방정부는 았았다고 설명하였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53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Dr. Uwe Jens, Wolfgang Roth, Hans Gottfried Bernrath, Hans Berger, Lieselott Blunck, Hans Martin Bury, Dr. Konrad Elmer, Anke Fuchs (Köln), Dr. Fritz Gautier, Volker Jung (Düsseldorf), Volkmar Kretkowski, Dr. Elke Leonhard-Schmid, Herbert Meißner, Albert Pfuhl, Joachim Poß, Peter W. Reuschenbach, Otto Schily, Ernst Schwanhold, Dr. Sigrid Skarpelis-Sperk, Dr. Dietrich Sperling, Dr. Norbert Wiczorek, Dr. Hans-Jochen Vogel
und der Fraktion der SPD
— Drucksache 12/309 —

Zur Übertragung von Unternehmen (bzw. Unternehmensteilen) der ehemaligen DDR und der Konditionen dieser Übertragungen; am Beispiel der Deutschen Bank AG und der Deutschen Kreditbank AG

Die Deutsche Kreditbank AG und die Deutsche Bank AG haben vor der Währungsunion noch unter Verantwortung der Regierung der ehemaligen DDR eine Tochtergesellschaft, die „Deutsche Bank Deutsche Kreditbank AG“ gegründet. Durch diese Kooperation mit der Deutschen Kreditbank AG konnte die Deutsche Bank AG mit 122 Zweigstellen, die von der Deutschen Kreditbank eingebracht wurden, in der ehemaligen DDR bankwirtschaftlich tätig werden – unter Ausschaltung der Kreditrisike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Im Hinblick auf den damit erreichten Wettbewerbsvorteil interessiert, wie die Geschäftsbeziehung zustande kam und welche Konditionen der Bewertung festgelegt wurden. Ursprünglich betrug die Kapitalausstattung der Deutschen Bank Deutsche Kreditbank AG 600 Mio. Mark der DDR, wobei 300 Mio. Mark auf das Grundkapital und 300 Mio. Mark der DDR auf die Rücklagen entfielen. Hieran war die Deutsche Bank AG zunächst mit 49 Prozent beteiligt.

Dieses Kapital wurde bei der Währungsumstellung 1:2 umgestellt. Nach der Währungsunion hat sich ausschließlich die Deutsche Bank AG an einer Kapitalerhöhung beteiligt, wodurch das Gesamtkapital auf 1 Mrd. DM erhöht wurde (Grundkapital: 500 Mio. DM, Rücklagen 500 Mio. DM). Damit sank der Anteil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n der gemeinsamen Tochtergesellschaft auf rund 15 Prozent. Diese restlichen Kapitalanteile hat die Deutsche Bank AG von der Treuhandanstalt in Berlin erworben. Die Deutsche Bank AG ist seither 100prozentige Eigentümerin der Tochtergesellschaft.

Die Antwort wurde namens der Bundesregierung mit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der Finanzen vom 26. April 1991 übermittelt.

Die Drucksache enthält zusätzlich – in kleinerer Schrifttype – den Fragetext.

Da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Rechtsnachfolgerin der ehemaligen DDR ist, und die Beteiligungen der ehemaligen DDR auf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gegangen sind, stellen wir – unabhängig von der damaligen Verantwortung der ehemaligen DDR-Regierung – folgende Fragen an die Bundesregierung:

1. Welche anderen Kreditinstitute waren an einer Kooperation und/oder Übernahme der Deutschen Kreditbank AG interessiert?

Die Gründung der Joint-venture Bank Deutsche Bank Kreditbank AG am 1. Juni 1990 und die ihr vorausgehenden Kooperationsgespräche fielen in die Zuständigkeit der Regierung der DDR. Erst am 21. Juni 1990 wurde die Zuständigkeit der Treuhandanstalt für die Deutsche Kreditbank AG begründet.

2. Warum fiel die Entscheidung zugunsten der Deutschen Bank AG?

Die Motive der noch von der Regierung der DDR getroffenen Entscheidung sind der Bundesregierung nicht bekannt.

3. Nach welchen Kriterien wurde die Entscheidung getroffen?

Auf die Antwort zu Frage 2 wird verwiesen.

4. Wie wurden die Grundstücke und Gebäude, die die Deutsche Kreditbank AG als Sacheinlage in die Tochtergesellschaft Deutsche Bank Deutsche Kreditbank AG eingebracht hat, bewertet?
 - Wurden bei Bewertung der Grundstücke die Buchwerte in der Bilanz der Deutschen Kreditbank in Mark der DDR zugrunde gelegt?
 - Wurden bei der Bewertung der Grundstücke und Gebäude die damaligen Verkehrswerte in der DDR zugrunde gelegt?
 - Wurde ein Bewertungsgutachten eingeholt und von welcher der Vertragsparteien?
 - Wurde eine Nachbewertung der Grundstücke und Gebäude (z. B. in einem Zeitraum von zwei bis fünf Jahren) vereinbart?

Vo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wurden keine Grundstücke und Gebäude in die Deutsche Bank Kreditbank AG eingebracht. Die Deutsche Bank Kreditbank AG nutzt die Grundstücke und Gebäude aufgrund von Mietverträgen, die mit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bgeschlossen worden sind.

5. Unter welchen Konditionen und nach welchen Bewertungsmaßstäben erfolgte die spätere Kapitalzuführung durch die Deutsche Bank AG?
 - Wurden im Rahmen der Kursfestsetzung bei der Bewertung der Grundstücke die Buchwerte in der Bilanz in Mark der DDR zugrunde gelegt?
 - Wurden im Rahmen der Kursfestsetzung bei der Bewertung der Grundstücke und Gebäude die damaligen Verkehrswerte in der DDR zugrunde gelegt?
 - Wurde ein Bewertungsgutachten eingeholt, und von welcher der Vertragsparteien?
 - Wurden Substanz- oder Ertragswert-Ermittlungsverfahren durchgeführt?
 - Wenn ja, von wem und mit welchem Ergebnis?
 - Wurde der Firmenwert ermittelt? Von wem? Mit welchem Ergebnis?

Bei der Kapitalzuführung handelt es sich um eine Kapitalerhöhung vom 19. Juli 1990, an der sich nur die Deutsche Bank AG beteiligt hat; Grundkapital und Rücklagen wurden jeweils um 350 Mio. DM erhöht. Eine Sacheinlage erfolgte nicht. Es wurde keine Bewertung durchgeführt.

6. Wie wurden die restlichen Kapitalanteile bewertet, die die Treuhandanstalt Berlin an die Deutsche Bank AG verkauft hat?
 - Wurden Substanz- oder Ertragswert-Ermittlungsverfahren durchgeführt?
 - Wenn ja, von wem und mit welchem Ergebnis?
 - Wurde der Firmenwert ermittelt? Von wem? Mit welchem Ergebnis?
 - Wurden bei der Bewertung der Grundstücke und Gebäude die Buchwerte in der Bilanz der Deutschen Bank Deutsche Kreditbank AG zugrunde gelegt?
 - Wurden bei der Bewertung der Grundstücke und Gebäude die damaligen Verkehrswerte in der DDR zugrunde gelegt?
 - Wurden bei der Bewertung der Grundstücke und Gebäude geschätzte Zukunftswerte zugrunde gelegt?
 - Wurde ein Bewertungsgutachten eingeholt und von welcher Vertragspartei?
 - Hat sich die Treuhandanstalt Berlin eine Nachbewertung der Grundstücke und Gebäude innerhalb der nächsten zwei bis fünf Jahre vorbehalten?

Da es sich bei der Deutschen Bank Kreditbank AG um eine Neugründung handelte und kein Altgeschäft übertragen wurde, kam eine Ertragswertermittlung nicht in Betracht. Statt dessen wurden neben dem eingezahlten Kapital hilfsweise die von der Deutschen Bank AG ersparten Aufwendungen für die Objektsuche, die Personalsuche, die Kundenakquisition sowie die Vorteile aus der sofortigen Marktpräsenz und der Geschäftsbesorgung für die Altkredite kaufpreiserhöhend berücksichtigt.

Unabhängig vom Erwerb der Aktien werden in Option der Deutschen Bank AG vier Filialgebäude der Deutschen Kreditbank AG zum Verkehrswert verkauft; die Bewertung ist noch nicht abgeschlossen, eine Nachbewertung ist vorgesehen.

7. Wie wird, sofern die Treuhandanstalt Berlin sich eine Nachbewertung vorbehalten hat, sichergestellt, daß hierbei angemessene/richtige Verkehrswerte ermittelt werden?
- Durch Einschaltung
 - von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 von Liegenschaftsexperten,
 - der Bundesvermögensverwaltung?

Die Verkehrswertermittlung wird durch unabhängige Liegenschaftsexperten sichergestellt.

문서 번호 57

베를린은행에 의한 베를린국립은행의 인수

1992 년 1 월 6 일

담당자 / 기관: Berliner Bank, Berliner Stadtbank

내용:

서베를린의 베를린은행이 1991 년 6 월 27 일자로 신탁청이 관리하고 있는 동독의 마지막 신용기관인 베를린시은행을 4 천 9 백만 DM 에 인수하였다. 베를린시은행이 보유한 자기자산은 4 억 9 천 5 백 7 십만 DM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과정에서 신탁청이 인수의사를 가진 다른 기관과 진지하게 협상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베를린은행은 베를린시은행의 직원 1090 명의 계속 고용을 보장할 의무도 없었다. 베를린은행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 수 있는 경우에만 750 명 정도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고 합의 하였다. 이 인원마저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처: Der Spiegel, 2/1992,

<http://magazin.spiegel.de/EpubDelivery/spiegel/pdf/13679257>

Tarifneuling am Donnerstag eine schroff formulierte Abweisung.

Auch Kohl fühlt sich gelehmt. Im kleinen Kreis war durchaus einmal ähnliches erwogen worden, wie es Möllemann jetzt publik machte. Es sei jedoch, so Kanzlervertraute, nur davon die Rede gewesen, den Tarifstreit abzuwarten und bei einer Zuspitzung zu prüfen, ob ein spektakulärer Akt wie die wohlabgestimmte Ankündigung eines Besetzungsgesetzes in die richtige Richtung wirken würde.

Möllemann, im Urlaub auf Gran Canaria, erinnerte sich eines Präzedenzfalls aus den Anfangszeiten der rechtsliberalen Koalition. Die Regierung hatte 1982 den Beamtenzuschlag für 1983 und 1984 vorab auf zwei Prozent begrenzt. Möllemann, heiter gestimmt, gibt sich milde: „Ich bin ja nicht so hart, wieder eine Nullrunde zu fordern.“

Gerade die Erfahrungen von 1982 sprechen nicht dafür, daß sich überhaupt noch einmal eine Politikermehrheit dafür finden wird, die Beamten zu vergrätzen: Der Erfolg war gering.

Die Industriegewerkschaften kümmernten sich damals nicht um die Beamten, sie blieben bei ihrem Kurs und schlossen durchweg höher ab. Auch die ÖTV erzielte einen besseren Abschluß.

Die Folge war unvermeidlich: Nach Abschluß der Tarifrunde sah die Bundestagsmehrheit schließlich auch bei den Beamten eine neue Lage und beserte nach: Die Staatsdiener standen am Ende fast genauso gut da wie die Arbeiter und Angestellten.

Banken

Besonders elegant

Die Berliner Bank hat ihre Probleme gelöst. Die Treuhand überließ dem Institut die Stadtbank im Ostteil zum Spottpreis.

Ein gewisser Stolz war unüberhörbar, als Wolfgang Steinriede auf der letzten Betriebsversammlung des vergangenen Jahres Bilanz zog. „Wir haben also“, sagte der Chef der Berliner Bank, „viel, ich meine sogar sehr viel erreicht.“

Steinriede kann tatsächlich stolz sein, allerdings weniger auf sein eigentliches Bankgeschäft. Das könnte besser laufen.

Der Erfolg des Bankers beruht auf einem Schnäppchen. Sein Haus kaufte der Treuhand im Sommer das letzte noch übriggebliebene Kreditinstitut der Ex-DDR, die Berliner Stadtbank, für einen Spottpreis ab.

Der spektakuläre Coup verlängert die Konzernbilanz der Berliner Bank auf einen Schlag um ein Drittel auf über 55 Milliarden Mark. Die Aktionäre, das Land Berlin, die Gothaer Versicherung und ein paar Kleinanleger, können zufrieden sein.

Den Schaden hat der Steuerzahler, denn die Treuhand hat die Bank weit unter Wert verkauft. Die Berliner Anstalt verzichtete auf viele Millionen Mark – zum Wohle der Berliner Bank.

Die Stadtbank, einst das Stadtkontor Ost-Berlins; war zuständig für die Kreditvergabe an volkseigene Betriebe und Wohnungsbaugenossenschaften. Steinriede bemühte sich schon im Frühjahr 1990 um das Institut, er wollte so schnell wie möglich „eine familiäre Wiederver-



Bankier Steinriede: „Eine familiäre Wiedervereinigung“

einigung feiern“. Die Berliner Bank ist 1950 aus dem damaligen Stadtkontor West hervorgegangen.

Der Banker aus dem Westteil hatte von Anfang an eine gute Verhandlungsposition. Sein Institut schien der natürliche Partner der Ost-Bank zu sein, von ernsthaften Verhandlungen mit anderen Bewerbern ist Steinriede jedenfalls nichts bekannt.

Garantien für eine Weiterbeschäftigung der 1090 Mitarbeiter mußte Steinriede nicht übernehmen. Lediglich ein Versprechen ließ er sich abringen. Zumindest 750 Beschäftigte sollten gehalten werden, sofern sie fürs Bankgeschäft qualifiziert werden könnten. Die Zahl ist schon heute unterschritten.

Die betriebliche Vereinigung wurde am 27. Juni vergangenen Jahres vollzogen. Das West-Institut bekam das Stadtbank-Kapital und Rücklagen in Höhe

von insgesamt 495,7 Millionen Mark in die Bücher. Der Kaufpreis beträgt lediglich 49 Millionen Mark.

Daß der Zukauf so billig werden würde, hatte nicht einmal der Aufsichtsrat erwartet. Er ermächtigte Steinriede Anfang Juni, einen, so das Protokoll, „maximalen Kaufpreis von 60 bis 70 Millionen Mark“ zu zahlen.

Steinriede hat nicht nur einen noch günstigeren Preis ausgehandelt, er hat sich zudem eine besonders elegante Form der Finanzierung gesichert.

So gibt es in dem Vertrag den bemerkenswerten Zusatz, die Berliner Bank sei schon vom Sommer 1990 an, also ein Jahr vor dem Kauf, voll gewinnberechtigt. Was das dem Geldhaus brachte, haben Steinriedes Buchhalter intern längst ausgerechnet: rund 64 Millionen Mark.

Der Kaufpreis ist, kaum bezahlt, schon wieder in der Kasse. Es bleiben sogar noch 15 Millionen Mark übrig.

Steinriede kann das Geld dringend brauchen, in seinem Bankkonzern gibt es einige Problemfälle. So mußte allein die Allgemeine Privatkundenbank im vergangenen Jahr mit zehn Millionen Mark unterstützt werden.

Mehr aber noch als das Bargeld hilft dem Banker das Eigenkapital von knapp einer halben Milliarde Mark. Es gibt ihm den nötigen Spielraum, um das Bankgeschäft ausbauen zu können.

Mit einem Schlag ist der Banker nun sein Grundproblem los.

Dem Großaktionär, dem Land Berlin, fehlte in den vergangenen Jahren stets das Geld, um das Unternehmen mit frischem Kapital zu versorgen.

Wegen der leeren Kassen entwarfen Vorstände der Berliner Bank gemeinsam mit Kollegen der Landesbank Berlin ein Konzept (SPIEGEL 40/1991). Das Land sollte seine Beteiligungen in eine Holding einbringen und zum Teil verkaufen. Der neue Finanzkonzern hätte Platz sechs unter den großen deutschen Universalbanken eingenommen.

Doch aus dem Großprojekt werde „wahrscheinlich wohl doch nichts“, klagt Steinriede. Die Berliner Regierung, die eigentlich im Herbst zustimmen wollte, ziehe nicht richtig mit.

Steinriede muß das nicht allzusehr ärgern. Er hat dank der Treuhand auch so viel, sogar sehr viel erreicht. ◀

헤센-튀링겐 공동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 년 3 월 10 일

담당자 / 기관: Land Hess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Hans Eichel;
Freistaat Thüring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Bernhard Vogel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튀링겐주와 서독의 헤센주가 공동으로 저축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협약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헤센주와 튀링겐 주는 두 연방주의 주민과 경제에 도움을 되도록 저축금고(Sparkasse)의 지역 금고협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헤센-튀링겐주 공동의 저축금고협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기구의 목적은 튀링겐주의 저축금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두 연방주의 개발기회를 증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의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조약은 저축금고, 지로구좌협회, 공동의 주립은행, 주택은행과 보험을 포괄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두 연방주는 헤센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가 튀링겐 지역의 저축금고와 그 협회를 받아들여서 헤센-튀링겐 공동의 기구로 존속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협회의 명칭은 헤센-튀링겐 저축금고 및 지로구좌 협회이다. 이 협회는 비영리목적의 단체이다. 이 협회는 저축금고를 통제하기 위해 운영부서 외에 감사부서를 둔다. 이 기구에 대한 주 정부의 감독은 헤센과 튀링겐 주정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며, 저축금고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권 또한 양쪽 주정부가 갖고 있다.

헤센 주립은행은 헤센-튀링겐-지로구좌센터로 개칭된다. 이 은행의 지주는 헤센과 튀링겐주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이다.

헤센과 튀링겐주는 각 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동일한 저축금고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과는 별도로 두 연방주의 감독원이 각 지역의 저축금고를 관리 감독한다. 그리고 두 기관은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

출처: HessGVBl. I S. 190, ThürGVBl.

Staatsvertrag



**über die Bildung einer gemeinsamen
Sparkassenorganisation Hessen-Thüringen**

Staatsvertrag

über die Bildung einer gemeinsamen Sparkassenorganisation Hessen-Thüringen

zwischen dem Land Hess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und

dem Freistaat Thüringen,
vertreten durch den Ministerpräsidenten

vom 10. März 1992 (HessGVBl. I S. 190, ThürGVBl.
S. 291), zuletzt geändert durch den Staatsvertrag vom
20. Juni 2008 (HessGVBl. I S. 983, ThürGVBl.
S. 217).

Bei dem hier abgedruckten Text des Staatsvertrages handelt es sich um eine konsolidierte Fassung, die die bisherigen Änderungen berücksichtigt. Sie dient lediglich der Information. Maßgeblich ist insoweit die im jeweiligen Landesgesetzblatt abgedruckte Fassung mit allen nachfolgenden Änderungen.

Die Vertragschließenden sind übereingekommen, im Hinblick auf vielfältige, teils weit in die Vergangenheit zurückreichende Verbindungen zwischen den heutig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mit der Zielsetzung

- die Leistungsfähigkeit der Sparkassen in Thüringen kurzfristig zu verbessern,
- die Entwicklungschancen der Sparkassen in beiden Ländern zu erhöhen und
- mittelfristig zur Entwicklung eines gemeinsamen Wirtschaftsraumes beizutragen

zum Vorteil der Bevölkerung und Wirtschaft beider Länder sowie der Sparkassen und ihrer kommunalen Träger eine gemeinsame Sparkassenorganisation für Hessen und Thüringen zu bilden. Diese soll die Ebenen eines gemeinsamen Sparkassen- und Giroverbandes, einer gemeinsamen Landesbank – Girozentrale –, einer rechtlich unselbstständigen oder selbstständigen Bausparkasse und der Versicherungen umfassen (S-Finanzgruppe Hessen-Thüringen). Als Ausdruck einer gleichwertigen Partnerschaft wird die Staatsaufsicht einvernehmlich ausgeübt.

Die Vertragsschließenden treffen daher folgende

Vereinbarungen

Teil I, Abschnitt A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Artikel 1

(1) Die Vertragsschließenden stimmen darüber überein, dass der Hessische Sparkassen- und Giroverband,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Frankfurt am Main, als gemeinschaftliche Einrichtung der kommunalen Sparkassen und ihrer Träger in d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unter Aufnahme der Thüringer Sparkassen und deren Träger fortbesteht.

(2) Der Verband erhält den Namen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nachstehend „Verband“ genannt). Sein Verbandsgebiet umfasst die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Der Verband hat seinen Sitz in Frankfurt am Main und Erfurt. Mitglieder des Verbandes sind die in Hessen und Thüringen ansässigen kommunalen Sparkassen und ihre Träger. Private Sparkassen können durch Vertrag, außerhalb der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ansässige öffentlich-rechtliche Sparkassen und deren Träger durch Beitritt in den Verband aufgenommen werden.

(3) Der Verband hat die Aufgabe, auf der Grundlage der Gemeinnützigkeit die gemeinsamen Angelegenheiten seiner Mitgliedsparkassen bei der Erfüllung ihrer Aufgaben wahrzunehmen, das Sparkassenwesen sowie das öffentliche Bauspar- und Versicherungswesen in Anpassung an die Entwicklungen im Finanzdienstleistungsbereich zu fördern, Prüfungen bei den Mitgliedsparkassen durchzuführen, Sparkassenmitarbeiter aus- und fortzubilden und die Aufsichtsbehörden gutachtlich zu beraten. Im Übrigen bestimmen sich Aufgaben, Befugnisse und Aufbau des Verbandes nach seiner Verbandssatzung.

(4) Zur Prüfung der Sparkassen besteht innerhalb des Verbandes neben der Geschäftsstelle eine Prüfungsstelle. Die Satzung des Verbandes hat für die Prüfungsstelle die Registrierung als Abschlussprüfer, die Bindung an die Berufsgrundsätze nach den fü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geltenden Bestimmungen, die Beachtung der für die Prüfung von großen Kapitalgesellschaften geltenden Bestimmungen sowie die Pflicht zur Durchführung der Prüfungen unabhängig von Weisungen der Organe des Verbandes vorzusehen. Die Abberufung des Leiters der Prüfungsstelle bedarf der Zustimmung der Aufsichtsbehörde.

(5) Der Verband kann im Rahmen seiner Aufgaben

1. sich a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und Übernahme einer Haftung beteiligen;
2. allein oder zusammen mit andere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selbstständige öffentlich-rechtliche oder privatrechtliche Kreditinstitute, Versicherungen und sonstige Unternehmen des Finanzdienstleistungsbereichs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und Übernahme einer Haftung errichten oder sich an solchen beteiligen. Die Errichtung solcher Unternehmen als rechtlich selbstständige Unternehmen des privaten Rechts ist auch mit privatrechtlichen juristischen Personen zulässig;
3. allein oder zusammen mit anderen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eine selbstständige Bausparkasse des öffentlichen oder privaten Rechts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und Übernahme einer Haftung errichten oder sich an einer solchen beteiligen. Nr. 2 Satz 2 gilt entsprechend;

4. allein oder unter mehrheitlicher Beteiligung juristischer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zusammen mit Dritten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oder privaten Rechts – letztere insoweit als Beliehene –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und Übernahme einer Haftung zur teilweisen oder vollständigen Wahrnehmung von Aufgaben der Beteiligungsverwaltung und Unternehmenssteuerung der zur S-Finanzgruppe Hessen-Thüringen gehörenden Unternehmen errichten. Der Verband kann seine Beteiligung am Stammkapital der Landesbank Hessen-Thüringen – Girozentrale – (Art. 5 Abs. 1) durch Beschluss der Verbandsversammlung auf eine nach Satz 1 errichtete juristische Person als Holding übertragen; zur Durchführung kann die Beteiligung am Stammkapital in der Satzung der Landesbank Hessen-Thüringen – Girozentrale – abweichend von den Bestimmungen des Abschnittes B geregelt werden. Satz 2 gilt entsprechend, wenn und soweit der Verband bei Unternehmen Kapital- oder Haftungsträger wird. Die Aufsicht über eine nach Nr. 4 errichtete 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übt, unbeschadet der Aufsicht nach anderen Rechtsvorschriften, die für den Verband zuständige Staatsaufsichtsbehörde aus; Art. 2 Abs. 1 bis 3 gilt entsprechend;
5. anderen Einrichtungen beitreten, sich an solchen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beteiligen oder solche unter Leistung einer Einlage und Übernahme einer Haftung errichten, die der Förderung der Belange der Mitgliedssparkassen dienen.



Teil I, Abschnitt A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Maßnahmen nach Satz 1 Nr. 2 bis 4 bedürfen der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wobei sicherzustellen ist, dass die Staatsaufsicht nicht eingeschränkt wird. Maßnahmen nach Satz 1 Nr. 1 und 5 sind der Aufsichtsbehörde rechtzeitig anzuzeigen. Dabei bedürfen Maßnahmen nach Satz 1 Nr. 5 der Genehmigung, wenn die Beteiligung oder die Übernahme von Haftungsanteilen mehr als zehn vom Hundert des ausgewiesenen Eigenkapitals des Verbandes ausmacht.

(6) Änderungen der Verbandssatzung werden nach dem in der Satzung festgelegten Verfahren durch die Verbandsversammlung beschlossen; sie bedürfen der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und sind in den Staatsanzeigern für die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unter Hinweis auf die Genehmigung zu veröffentlichen. Die Änderungen treten, wenn kein anderer Zeitpunkt bestimmt ist, am Tag nach der letzten der beiden Veröffentlichungen in Kraft.

Artikel 2

(1) Die Staatsaufsicht über den Verband und dessen Prüfungsstelle üben die Ministerien in Hessen und Thüringen, denen die oberste Sparkassenaufsicht obliegt, einvernehmlich aus. Die Zuständigkeit der Aufsichtsbehörde wechselt im Turnus von vier Jahren, beginnend im Jahr 1992 mit Hessen und wechselnd nach Thüringen am 1. Januar 1996. Das jeweils zuständige Ministerium führt bei der Genehmigung von Änderungen der Satzung sowie bei sonstigen Aufsichtsentscheidungen das Einvernehmen des jeweils anderen Ministeriums herbei; Einzelheiten werden in einer zwischen beiden Ministerien abzuschließenden Verwaltungsvereinbarung geregelt.

(2) Die Aufsichtsbehörde hat darauf zu achten, dass die Tätigkeit des Verbandes mit Gesetz und Satzung im Einklang steht. Sie kann die hierzu erforderlichen Maßnahmen treffen, insbesondere auch verlangen, dass der Vorstand zu einer bestimmten Angelegenheit einberufen wird.

(3) Die Aufsichtsbehörde und das jeweils andere Ministerium sind zu den Versammlungen einzuladen.

(4) Die Sparkassenaufsichtsbehörden in Hessen und Thüringen können sich im Rahmen ihrer Aufgaben des Verbandes und seiner Prüfungsstelle bedienen.

(5) Die Aufsichtsbehörde überwacht gegenüber der Prüfungsstelle die Einhaltung der sich aus der Satzung nach Art. 1 Abs. 4 ergebenden Pflichten. Sie kann hierzu Untersuchungen durchführen, zu diesen auch Dritte heranziehen sowie geeignete Maßnahmen anordnen. Erhält sie konkrete Hinweise auf Pflichtverstöße seitens der zuständigen Stelle eines anderen Mitgliedsstaates der Europäischen Union, hat sie diese zu untersuchen und geeignete Maßnahmen anzuordnen. Im Fall eines erheblichen Pflichtverstoßes kann sie vom Verband die Abberufung des Leiters der Prüfungsstelle verlangen. Die Aufsichtsbehörde veröffentlicht jährlich ein Arbeitsprogramm und einen Tätigkeitsbericht zur Überwachung der Prüfungsstelle.



Teil I, Abschnitt A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6) Die Aufsicht nach Abs. 5 wird von natürlichen Personen wahrgenommen, die in den für die Abschlussprüfung relevanten Bereichen über entsprechende Kenntnisse verfügen. Sie dürfen mindestens drei Jahre vor ihrer Beauftragung mit der öffentlichen Aufsicht keine Abschlussprüfung durchgeführt haben, keine Stimmrechte in einer Prüfungsgesellschaft gehalten haben, weder Mitglied eines Verwaltungs- oder Leitungsorgans einer Prüfungsgesellschaft noch bei einer Prüfungsgesellschaft angestellt noch in sonstiger Weise mit einer Prüfungsgesellschaft verbunden gewesen sein.

(7) Die bei der Durchführung dieser Aufsicht durch die Beauftragung Dritter entstehenden Kosten hat der Verband zu tragen.

Artikel 3

D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kann sich mit anderen öffentlich-rechtlichen Sparkassen- und Giroverbänden länderübergreifend vereinigen. Die Vereinigung ist durch die Verbandsversammlung zu beschließen. Die Vereinigung kann im Wege der Aufnahme oder der Neubildung unter Eintritt von Gesamtrechtsnachfolge erfolgen. Der Verband kann im Fall der Vereinigung durch Aufnahme sowohl aufnehmende als auch übertragende Körperschaft sein. Die Vereinigung bedarf der Genehmigung der Landesregierungen.

Abschnitt B

Landesbank Hessen-Thüringen – Girozentrale –

Artikel 4

Die Hessische Landesbank erhält den Namen „Landesbank Hessen-Thüringen – Girozentrale –“ (nachstehend „Bank“ genannt). Sie ist eine rechtsfähige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Sie ist mündelsicher. Ihr Sitz ist in Frankfurt am Main und in Erfurt. Die Bank ist berechtigt, ein Siegel mit ihrem Namen zu führen.

Artikel 5

(1) Inhaber des Stammkapitals der Bank ist d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als deren Träger.

(2) Das Stammkapital kann durch Einlagen oder aus eigenen Mitteln der Bank erhöht werden.

(3) Der Träger unterstützt die Bank bei der Erfüllung ihrer Aufgaben mit der Maßgabe, dass ein Anspruch der Bank gegen den Träger oder eine sonstige Verpflichtung des Trägers, der Bank Mittel zur Verfügung zu stellen, nicht besteht.

(4) Der Träger kann allein oder gesamtschuldnerisch mit anderen Trägern oder Dritten zeitlich befristete oder betragsmäßig festgelegte Garantien gegen eine marktgerechte Gebühr übernehmen.

Artikel 6

(1) Die Bank haftet für ihre Verbindlichkeiten mit ihrem gesamten Vermögen. Die Haftung des Trägers ist auf das satzungsmäßige Kapital beschränkt.

(2) Der Träger der Bank am 18. Juli 2005 haftet für die Erfüllung sämtlicher zu diesem Zeitpunkt bestehender Verbindlichkeiten der Bank. Für solche Verbindlichkeiten, die bis zum 18. Juli 2001 vereinbart waren, gilt dies zeitlich unbegrenzt, für danach bis zum 18. Juli 2005 vereinbarte Verbindlichkeiten nur, wenn deren Laufzeit nicht über den 31. Dezember 2015 hinausgeht. Der Träger wird seinen Verpflichtungen aus der Gewährträgerhaftung gegenüber den Gläubigern der bis zum 18. Juli 2005 vereinbarten Verbindlichkeiten umgehend nachkommen, sobald er bei deren Fälligkeit ordnungsgemäß und schriftlich festgestellt hat, dass die Gläubiger dieser Verbindlichkeiten aus dem Vermögen der Bank nicht befriedigt werden können. Verpflichtungen der Bank auf Grund eigener Gewährträgerhaftung oder vergleichbarer Haftungszusage sind vereinbart und fällig im Sinne der Sätze 1 bis 3 in dem gleichen Zeitpunkt wie die durch eine solche Haftung gesicherte Verbindlichkeit. Mehrere Träger haften als Gesamtschuldner, im Innenverhältnis gemäß der Regelung in der Satzung der Bank.

(3) Die Thüringer Sparkassen und Gewährträger haften nicht für Verbindlichkeiten, die vor dem Inkrafttreten des Staatsvertrages entstanden sind.

(4)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r Bank, die am 31. Dezember 1989 bestanden, besteht, soweit nicht die Befriedigung aus dem Vermögen der Bank zu erlangen ist, neben der Gewährträgerhaftung des Verbandes die uneingeschränkte Gewährträgerhaftung des Landes Hessen. Das Land Hessen und der Verband haften insoweit als Gesamtschuldner.

Artikel 7

(aufgehoben)

Artikel 8

(1) Der Bank obliegen insbesondere die Aufgaben einer Sparkassenzentralbank und einer Kommunalbank in d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Die Bank ist berechtigt, Pfandbriefe, Kommunalschuldverschreibungen und sonstige Schuldverschreibungen auszugeben. Sie kann auch Bankgeschäfte anderer Art und weitere in der Satzung vorgesehene Geschäfte betreiben, soweit sie unmittelbar oder mittelbar der Zweckerfüllung der Bank dienen.

(2) Die Bank ist Girozentrale der Sparkassen in d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Sie pflegt den bargeldlosen Zahlungsverkehr, verwaltet die bei ihr angelegten Liquiditätsguthaben der Sparkassen und erfüllt insbesondere die Funktion des Liquiditätsausgleichs.

(3) Als Kommunalbank besorgt sie bankmäßige Geschäfte der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 sonstiger Körperschaften, Anstalten und Stiftungen des öffentlichen Rechts sowie von Unternehmen, die den aufgeführten Körperschaften und Verbänden nahe stehen.

(4) Die Bank kann für die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und für andere Träger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treuhänderische und Aufgaben der öffentlichen Förderung übernehmen. Für den Bereich der öffentlichen Förderung, insbesondere des Wohnungswesens und Städtebaus, der Wirtschaft, der Landwirtschaft und des Umweltschutzes, werden die Aufgaben durch bei der Bank in Hessen und Thüringen eingerichtete Geschäftsbereiche wahrgenommen. Im Zusammenhang mit der Übernahme von Aufgaben gemäß den Sätzen 1 und 2 durch die Bank können die Länder ihrer Rechtsaufsicht unterstehende, rechtlich unselbstständige Anstalten des öffentlichen Rechts errichten, diese mit der Wahrnehmung hoheitlicher Aufgaben in den Handlungsformen des öffentlichen Rechts als auch weiterer Aufgaben betrauen, für solche Anstalten die Haftung als Gewährträger vorsehen und Refinanzierungsgarantien übernehmen. Die Wahrnehmung der Aufgaben muss im Einklang mit den Beihilfavorschriften der Europäischen Union stehen. Für diese Anstalten kann durch Gesetz jeweils ein Ausschuss des Verwaltungsrates eingerichtet und dessen Mitgliederzahl, Zusammensetzung und Aufgaben bestimmt werden. Die Gesamtverantwortung der Organe der Bank ist dabei zu wahren. Soweit in der Satzung der Bank Bestimmungen über die Anstalten getroffen werden, bedürfen diese Bestimmungen des Einvernehmens mit dem für die betroffenen Anstalten haftenden Land.

(5) Die Bank betreibt eine Bausparkasse in d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nach den Vorschriften des Gesetzes über Bausparkassen unter der Bezeichnung „Landesbausparkasse Hessen-Thüringen“ als rechtlich unselbstständige Einrichtung; Art. 13 bleibt unberührt.

Artikel 9

Die Geschäfte der Bank sind unter Beachtung kaufmännischer Grundsätze zu führen. Dabei sind allgemeinerwirtschaftliche Gesichtspunkte zu berücksichtigen und die Belange der Sparkassen und der Kommunen zu förder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öffentlichen Auftrags der Bank ist die Erzielung von Gewinn nicht Hauptzweck des Geschäftsbetriebes.

Artikel 10

(1) Organe der Bank sind

1. die Trägerversammlung,
2. der Verwaltungsrat,
3. der Vorstand.

(2) Die Trägerversammlung beschließt in den durch Gesetz oder Satzung bestimmten Fällen, namentlich über

1. die Verwendung des Bilanzgewinns und die Deckung von Verlusten,
2. die Entlastung der Mitglieder des Vorstandes und des Verwaltungsrates,
3. die Bestellung der Abschlussprüfer und von Prüfern in besonderen Fällen,
4. die Änderung der Satzung, soweit dies die Satzung vorsieht, und die Veränderung des Stammkapitals,
5. die Errichtung und Aufhebung von Zweigniederlassungen.

Sie vertritt die Bank nach Maßgabe der Satzung gegenüber den Vorstandsmitgliedern und den Verwaltungsratsmitgliedern.

(3) Aufgabe des Verwaltungsrates ist es insbesondere, die Geschäftsführung des Vorstandes zu überwachen. Der Verwaltungsrat kann aus seiner Mitte einen oder mehrere Ausschüsse bestellen, denen einzelne Aufgaben ganz oder teilweise, soweit gesetzlich zulässig, übertragen werden können. Die Zusammensetzung des Verwaltungsrates ist so zu regeln, dass ein Drittel der Verwaltungsratsmitglieder von den Bediensteten der Bank zu entsenden ist. Das Nähere über die Wahl und die Wählbarkeit der Bedienstetenvertreter in den Verwaltungsrat regelt eine Wahlordnung, die von dem für die Staatsaufsicht zuständigen Minister (Art. 12 Abs. 1 Satz 1) als Rechtsverordnung zu erlassen ist; sie bedarf der Verkündung in beiden Ländern.

(4) Nimmt die Bank einen organisierten Markt im Sinne des § 2 Abs. 5 des Wertpapierhandelsgesetzes in der Fassung vom 9. September 1998 (BGBl. I S. 2709),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1. Dezember 2007 (BGBl. I S. 3198), durch von ihr ausgegebene Wertpapiere im Sinne des § 2 Abs. 1 Satz 1 des Wertpapierhandelsgesetzes in Anspruch, hat der Verwaltungsrat als Prüfungsausschuss die in Satz 2 und 3 genannten Aufgaben. Er überwacht den Rechnungslegungsprozess, die Wirksamkeit des internen Kontrollsystems, des internen Revisionssystems und des Risikomanagementsystems sowie die Prüfung des Jahres- und Konzernabschlusses. Er überprüft und überwacht die Unabhängigkeit des Abschlussprüfers, insbesondere die von diesem für die Bank erbrachten zusätzlichen Leistungen. Mindestens ein Mitglied des Prüfungsausschusses muss unabhängig sein und über Sachverstand in Rechnungslegung oder Abschlussprüfung verfügen. Der Verwaltungsrat kann die Wahrnehmung dieser Aufgaben auf einen aus seiner Mitte gebildeten Ausschuss übertragen, dem mindestens ein Mitglied nach Satz 4 angehören muss. Das Nähere regelt die Satzung.

(5) Der Vorstand führt die Geschäfte der Bank und vertritt – ausgenommen in Angelegenheiten nach Abs. 2 Satz 2 – diese gerichtlich und außergerichtlich gegenüber Dritten.

Artikel 11

(1) Die weiteren Rechtsverhältnisse der Bank sind durch die vom Hessischen Sparkassen- und Giroverband am 14. November 1990 erlassene und im Staatsanzeiger für das Land Hessen 1990, S. 2902, veröffentlichte Satzung geregelt. Änderungen der Satzung werden vom Träger beschlossen. Die Satzung kann vorsehen, dass Satzungsänderungen von der Trägerversammlung beschlossen werden.

(2) Änderungen der Satzung bedürfen der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Sie sind unter Hinweis auf die erteilte Genehmigung in den Staatsanzeigern für die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zu veröffentlichen.

Artikel 12

(1) Für die Staatsaufsicht gilt Art. 2 Abs. 1 entsprechend. Die Aufsichtsbehörde kann alle erforderlichen Anordnungen treffen, um den Geschäftsbetrieb der Bank im Einklang mit den Gesetzen, der Satzung und den sonstigen Vorschriften zu halten.

(2) Die Beleihungsgrundsätze für das Realkreditgeschäft bedürfen der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3) Die Aufsichtsbehörde kann sich jederzeit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Bank unterrichten, an Ort und Stelle prüfen, mündliche und schriftliche Berichte anfordern sowie Akten und sonstige Unterlagen einsehen. Die Aufsichtsbehörde kann auch verlangen, dass der Verwaltungsrat und die Trägerversammlung zur Behandlung bestimmter Angelegenheiten einberufen werden. Die Aufsichtsbehörde und das jeweils andere Ministerium können an den Sitzungen dieser Organe teilnehmen.

(4) Die durch aufsichtsbehördliche Tätigkeit anfallenden Kosten sind, soweit sie nicht durch Gebühren oder sonstige Erstattungen gedeckt sind, den Ländern Hessen und Thüringen durch die Bank zu jeweils achtzig vom Hundert zu erstatten.

(5) Zur Überwachung der Deckung für die Pfandbriefe und Kommunal-schuldverschreibungen der Bank kann die Aufsichtsbehörde einen Treuhänder bestellen. Dieser erhält von der Aufsichtsbehörde eine angemessene Vergütung, die der zuständigen Staatskasse durch die Bank zu erstatten ist.

Artikel 13

(1) Die Bank kann nach entsprechender Beschlussfassung des Trägers, bei mehreren Mitträgern (Nr. 1) nach entsprechender Beschlussfassung der allein oder gemeinschaftlich mit anderen mehrheitlich am Stammkapital beteiligten Träger, mit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1. andere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als Mitträger
– auch unter Beteiligung am Stammkapital – aufnehmen;
2. sich – auch länderübergreifend – mit anderen öffentlich-rechtlichen Kreditinstituten durch Fusionsvertrag im Wege der Vereinigung durch Aufnahme oder durch Neubildung unter Eintritt von Gesamtrechtsnachfolge vereinigen, wobei die Bank im Falle der Vereinigung durch Aufnahme sowohl aufnehmendes als auch übertragendes Institut sein kann;
3. ihr Vermögen durch Vertrag, soweit dem Bundesrecht nicht entgegensteht, unter Eintritt von Gesamtrechtsnachfolge ganz oder zum Teil auf ein anderes öffentlich-rechtliches Kreditinstitut und das Vermögen ihrer Bausparkasse unter Wahrung der Belange der Bausparer auf eine öffentlich-rechtliche oder privatrechtliche Bausparkasse unter eigener oder unter Beteiligung des Trägers am Kapital dieses Kreditinstituts oder vollständiger oder teilweiser Beteiligung des Trägers am Kapital dieser Bausparkasse oder an der Haftung für diese übertragen. Im Falle der vollen Übertragung des Vermögens der Bank gegen den Erwerb eigener Beteiligungsrechte beschränken sich ihre Aufgaben auf diejenigen eines Holding-Instituts, andernfalls erlischt sie mit Beendigung der Vermögensübertragung ohne Liquidation;

4. andere öffentlich-rechtliche Kreditinstitute durch Vertrag an ihrem Kapital beteiligen. In den Verträgen sind namentlich die Haftung, die Beteiligung am Gewinn oder Verlust und an den Reserven sowie die Vertretung in den Organen der Bank zu regeln;
 5. sich nach Maßgabe der bundesrechtlichen Vorschriften in eine Aktiengesellschaft umwandeln. Als Gründer der Aktiengesellschaft gilt der Träger. Er übernimmt die Aktien der Gesellschaft. Die Satzung der Aktiengesellschaft wird durch das Vertretungsorgan des Trägers festgestellt.
- (2) Die Bank kann Beteiligungen Dritter in den Formen des Genussrechtskapitals und der typischen stillen Einlage nach Maßgabe des Gesetzes über das Kreditwesen in seiner jeweils gültigen Fassung aufnehmen sowie Beteiligungen an anderen öffentlich-rechtlichen oder privatrechtlichen Kreditinstituten eingehen. Für die Beteiligung der Bank am Stammkapital von Sparkassen bedarf es der Zustimmung der Landesregierungen der Vertragschließenden. Dies gilt auch, wenn sich eine Sparkasse, an der die Bank als Träger oder Anteilsinhaber mehrheitlich beteiligt ist, am Stammkapital von anderen Sparkassen beteiligt.

(3) Zur Durchführung können in den Fällen des Abs. 1 Nr. 1, 2 und 4 in der Satzung der Bank von den Bestimmungen des Abschnittes B abweichend geregelt werden:

1. die Rechtsnatur der Bank als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der Sitz als Mehrsitz sowie die Siegelführung der Bank (Art. 4);
2. die Beteiligung am Stammkapital einschließlich der Übertragung von Stammkapitalanteilen des Sparkassen- und Giroverbandes Hessen-Thüringen auf Dritte und der Übertragung von Stammkapitalanteilen Dritter auf den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3. die Organverhältnisse der Bank unter Wegfall der Trägerversammlung oder Veränderung ihrer Zuständigkeiten (Art. 10 Abs. 1 und 2) sowie unter Veränderung der in Art. 10 Abs. 3 vorgeschriebenen Zusammensetzung des Verwaltungsrates.

Im Falle des Abs. 1 Nr. 3 Satz 2 können die in Satz 1 Nr. 3 bezeichneten, von den Bestimmungen des Abschnittes B abweichenden Änderungen in der Satzung der Bank zur Anpassung an ihre veränderte Aufgabenstellung getroffen werden.

Artikel 14
(aufgehoben)



Teil I, Abschnitt C
Öffentliche Versicherungsanstalten

Abschnitt C
Öffentliche Versicherungsanstalten

Artikel 15 bis 32
(aufgehoben)

Abschnitt D

Gemeinsame Bestimmungen für den Verband und die Bank

Artikel 33

(1) Die Satzung des Hessischen Sparkassen- und Giroverbandes ist von der Verbandsversammlung unverzüglich an die Bestimmungen dieses Staatsvertrages anzupassen. Die geänderte Satzung ist unter Hinweis auf die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in den Staatsanzeigern der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zu veröffentlichen.

(2) Die Satzung der Bank ist unverzüglich an die Bestimmungen dieses Staatsvertrages anzupassen und unter Hinweis auf die nach Art. 11 Abs. 2 Satz 1 erteilte Genehmigung entsprechend Art. 11 Abs. 2 Satz 2 zu veröffentlichen.

(3) Der Name der Bank kann in deren Satzung abweichend von diesem Staatsvertrag bestimmt werden. Die auf die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hinweisenden Namensbestandteile sind dabei gleichrangig zu behandeln.

Artikel 34

(1) Auf den Verband und die Bank ist das Hessische Personalvertretungsgesetz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anzuwenden.

(2) Auf den Verband und die Bank sind das Thüringer Datenschutzgesetz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einschließlich seiner Verweisungen auf das Bundesdatenschutzgesetz und zum Datenschutz bei Dienst- und Arbeitsverhältnissen § 34 des Hessischen Datenschutzgesetzes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anzuwenden. Die Überwachung der Einhaltung der Vorschriften für den Datenschutz erfolgt einvernehmlich durch den Hessischen und den Thüringer Datenschutzbeauftragten. Art. 2 Abs. 1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die Verwaltungsvereinbarung schließen die beiden Datenschutzbeauftragten ab.



Teil I, Abschnitt D
Gemeinsame Bestimmungen
für den Verband und die Bank

(3) Auf den Verband und die Bank sind

1. für Hessen § 111 Abs. 1 Satz 1 der Hessischen Landeshaushaltsordnung auf den Verband, § 112 Abs. 2 Satz 1 der Hessischen Landeshaushaltsordnung auf die Bank und die Öffentlichen Versicherungsanstalten,
2. für Thüringen § 111 Abs. 1 Satz 1 der Thüringer Landeshaushaltsordnung auf den Verband, § 112 Abs. 2 Satz 1 der Thüringer Landeshaushaltsordnung auf die Bank und die Öffentlichen Versicherungsanstalten

nicht anzuwenden.

Artikel 35

Soweit Steueraufkommen des Verbandes und der Bank nicht von Gesetzes wegen auf die beteiligten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zu zerlegen sind, gilt ein Ausgleich entsprechend der wirtschaftlichen Verursachung als vereinbart. Anfallende Kosten werden von den Vertragsparteien entsprechend getragen.

Abschnitt E

Weiterentwicklung der Verbund- unternehmen der Sparkassenorganisation Hessen-Thüringen

Artikel 36

Die Vertragschließenden messen aus ihrer beiderseitigen Verantwortung für das Sparkassenwesen in Hessen und Thüringen der Weiterentwicklung der Verbundunternehmen der Sparkassen in Hessen und Thüringen – derzeit Bank – große Bedeutung bei. Sie sind sich deshalb darüber einig, im Interesse der langfristigen Sicherung und Erhaltung der Wettbewerbsfähigkeit der in Satz 1 genannten und gegebenenfalls weiterer entsprechender Unternehmen grundlegende Strukturveränderungen bei diesen, die von den Trägern mehrheitlich nach Maßgabe der Art. 13 Abs. 1 und Art. 32 in Anpassung an sich ändernde Strukturen und Größenverhältnisse im Bereich der öffentlich-rechtlichen Kredit- und Versicherungswirtschaft für erforderlich gehalten werden, im Rahmen der in diesem Staatsvertrag enthaltenen Regelungen fördernd zu begleiten. Grundlegende Strukturveränderungen sind insbesondere solche nach Art. 13 Abs. 1 und 2 und Art. 32 Abs. 1.

Teil II
Sparkassenrecht

Artikel 37

(1) Die Vertragsschließenden werden weitgehend einheitliches Sparkassenrecht anstreben, soweit nicht länderspezifische Gegebenheiten abweichende Regelungen erfordern. Die Vertragsschließenden halten an dem öffentlich-rechtlichen Sparkassenwesen fest. Die Übertragung von Sparkassenstammkapital an natürliche Personen oder juristische Personen des privaten Rechts ist ausgeschlossen.

(2) Unberührt davon üben die Aufsichtsbehörden beider Länder die Aufsicht über die in ihrem Gebiet gelegenen und tätigen Sparkassen aus. Die Aufsichtsbehörden beider Länder unterrichten sich gegenseitig über diese Aufsicht, insbesondere über Fragen und Tatbestände, die von übergreifendem Interesse sind.

Artikel 38

Sparkassen der Länder Hessen und Thüringen können länderübergreifend vereinigt werden; hierzu bedarf es einer staatsvertraglichen Vereinbarung.

Teil III

Schlussbestimmungen

Artikel 39

(1) Jedes Land kann zu Fragen der Auslegung und Ausführung dieses Vertrages eine gemeinsame Beratung der für die oberste Sparkassenaufsicht oder die Versicherungsaufsicht zuständigen Minister beantragen.

(2) Bei Unwirksamkeit einer Vertragsbestimmung verlieren die übrigen Bestimmungen nicht ihre Gültigkeit. Für eine infolge der Unwirksamkeit entstehende Lücke ist eine dem Sinn und Zweck dieses Vertrages entsprechende Regelung anzuwenden.

(3) Jedes Land kann Änderungen des Vertrages vorschlagen; die Vertragspartner werden sodann zügig in entsprechende Verhandlungen eintreten. D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ist rechtzeitig anzuhören.

Artikel 40

Dieser Staatsvertrag kann von jedem vertragschließenden Teil mit einer Frist von zwei Jahren zum Ablauf eines Kalenderjahres gekündigt werden.



Teil III
Schlussbestimmungen

Artikel 41

(1) Mit Ablauf des Staatsvertrages

- a) scheiden die Thüringer Verbandsmitglieder aus dem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ssen-Thüringen aus;
- b) stellt die Landesbank Hessen-Thüringen – Girozentrale – ihre Tätigkeit als Sparkassenzentralbank und – auf Wunsch des Landes Thüringen – als Kommunalbank in Thüringen ein;
- c) verhandeln auf entsprechenden Wunsch des Landes Thüringen die Vertragspartner unter Wahrung der Belange der Bausparer beider Länder zum Ziel der Einstellung der Tätigkeit der Bausparkasse in Thüringen.

(2) Die vermögensrechtlichen Ansprüche der Thüringer Sparkassen im Falle eines Ausscheidens aus dem Verband ergeben sich aus der Verbandssatzung.

Artikel 42

Dieser Vertrag bedarf der Ratifikation. Die Ratifikationsurkunden werden ausgetauscht. Die Änderung des Staatsvertrages tritt am Ersten des auf den Austausch der Ratifikationsurkunden folgenden Monats in Kraft.

Frankfurt am Main, den 10. März 1992

Der Hessische
Ministerpräsident

Eichel

Der Hessische Minister für
Wirtschaft, Verkehr
und Technologie

Welteke

Der Thüringer
Ministerpräsident

Dr. Vogel

Der Thüringer Minister für
Wirtschaft und Verkehr

Dr. Bohn



**Helaba
Landesbank
Hessen-Thüringen**

MAIN TOWER
Neue Mainzer Straße 52-58
60311 Frankfurt am Main
Telefon 0 69/91 32-01
Telefax 0 69/29 15 17

Bonifaciusstraße 16
99084 Erfurt
Telefon 03 61/2 17-71 00
Telefax 03 61/2 17-71 01

www.helaba.de

문서 번호 59

1991 년도 연방은행 사업보고서

1992 년 4 월 2 일

담당자 / 기관: Bundesregierung, Bundesländer, Deutsche Bundesbank

내용:

이 문서는 독일 연방은행의 191 년 사업보고서이다. 1991 년 독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이 보고서에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동독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제도적으로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동시에 구동독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동안 서독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의해 그리고 민간경제에서 대규모 투자가 없이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서독에서 진행하려던 사업들 중에 시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어둘 필요도 있다. 더욱이 통일된 독일은 그 크거나 국민경제적 능력으로 볼 때 서부유럽의 통합에서 핵심적인 국가의 하나이며 유럽전체의 변화과정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형성되는 유럽대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 독일의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주변국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독일은 이제 40 년 동안 분단되어 있던 동서독 두 지역의 주민들이 균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디뎠다. 무엇보다 안정된 구조와 강력한 경제성장은 서독 경제로 하여금 높은 공적인 이전지출을 통해 구동독지역에서의 구조조정과정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신연방지역에서 형성된 구며력은 서독지역의 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성장동력을 가져왔고 구동독 지역에서도 1991 년에는 서독으로부터 제공되는 막대한 이전지출에 힘입어 서서히 경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시에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성과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구동독지역 주민의 삶의 수준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 높은 실업율이 발생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무거운 유산이라고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 Geschäftsbericht der Deutschen Bundesbank für das Jahr 1991, Selbstverlag der Deutschen Bundesbank, Frankfurt am Main

Geschäftsbericht der
Deutschen
Bundesbank

für das Jahr 1991

Wir beklagen den Tod
der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Matthias Brockmann	† 10. 2. 1991
Peter Kloss	† 10. 2. 1991
Siegfried Pohl	† 14. 2. 1991
Holger Wiesemann	† 20. 2. 1991
Peter Gruner	† 1. 3. 1991
Utta Christiane Wallis	† 7. 3. 1991
Edeltraud Werstein	† 18. 3. 1991
Ilse Hirth-Hungerkamp	† 23. 3. 1991
Gerhard Bettac	† 6. 4. 1991
Elke Hoyer	† 12. 4. 1991
Horst Finkenzeller	† 25. 4. 1991
Alfred Wagner	† 10. 5. 1991
Rudi Seidel	† 20. 5. 1991
Joachim Heidrich	† 28. 5. 1991
Walter Schwartz	† 30. 5. 1991
Birgit Stippkugel	† 5. 6. 1991
Hans Ruge	† 13. 6. 1991
Werner Josef Schild	† 23. 6. 1991
Dr. Hermann-Joseph Dudler	† 30. 6. 1991
Günther Braun	† 10. 7. 1991
Georg Moosburger	† 1. 8. 1991
Heinrich Bullmahn	† 29. 8. 1991
Rudolf Dittel	† 14. 9. 1991
Karlheinz Petri	† 9. 10. 1991
Irmgard Klumpp	† 13. 10. 1991
Helmut Vogl	† 23. 10. 1991
Hans Retzer	† 29. 10. 1991
Hans Jacobasch	† 3. 11. 1991
Manfred Wahl	† 20. 11. 1991
Nikolaus Schopfer	† 3. 12. 1991
Beate Rice	† 9. 12. 1991
Karl Jarosch	† 20. 12. 1991
Manfred Schütze	† 29. 12. 1991

Wir gedenken auch der im Jahre 1991 verstorbenen ehemaligen
Angehörigen der Bank und der früheren Deutschen Reichsbank

Ihnen allen ist ein ehrendes Andenken gewiß

DEUTSCHE BUNDESBANK

**Mitglieder des
Zentralbankrats
der Deutschen
Bundesbank im
Geschäftsjahr
1991**

Karl Otto Pöhl, Vorsitzender des Zentralbankrats (bis 31. Juli)
Prof. Dr. Drs. h. c. Helmut Schlesinger, ab 1. August Vorsitzender des Zentralbankrats
Dr. Hans Tietmeyer, ab 1. August stellv. Vorsitzender des Zentralbankrats
Johann Wilhelm Gaddum
Hans Gliem (bis 15. Juni)
Prof. Dr. Helmut Hesse
Dr. Dieter Hiss
Prof. Dr. Otmar Issing
Prof. Dr. Dr. h. c. Reimut Jochimsen
Prof. Dr. Dr. h. c. Norbert Kloten
Hans-Jürgen Koebnick (ab 17. Juni)
Lothar Müller
Prof. Dr. Kurt Nemitz
Dr. Wilhelm Nölling
Dr. Heinrich Schreiner
Werner Schulz
Dr. Günter Storch
Dr. Karl Thomas
Ottomar Werthmöller (bis 20. Februar)

**Mitglieder des
Direktoriums der
Deutschen
Bundesbank und
der Vorstände
der Landes-
zentralbanken**

Am 1. April 1992 gehörten an

dem Direktorium der Deutschen Bundesbank

Prof. Dr. Drs. h. c. Helmut Schlesinger, Präsident der Deutschen Bundesbank
Dr. Hans Tietmeyer, Vizepräsident der Deutschen Bundesbank
Johann Wilhelm Gaddum
Prof. Dr. Otmar Issing
Dr. Günter Storch

den Vorständen der Landeszentralbanken

Baden- Württemberg	Prof. Dr. Dr. h. c. Norbert Kloten	Präsident
	Helmut Schieber	Vizepräsident
	Dr. Günter Schmid	
Bayern	Lothar Müller	Präsident
	Dr. Erich Fein	Vizepräsident
	Günter Bäumer	
Berlin	Dr. Dieter Hiss	Präsident
	Dietger Oberndorfer	Vizepräsident
Bremen	Hans-Georg Herrmann	Vizepräsident
Hamburg	Dr. Wilhelm Nölling	Präsident
	Hans-Jürgen Siegmund	Vizepräsident
Hessen	Dr. Karl Thomas	Präsident
	Walter Kulla	Vizepräsident
	Dr. Hans Georg Fabritius	
Niedersachsen	Prof. Dr. Helmut Hesse	Präsident
	Horst Langefeld	Vizepräsident
Nordrhein- Westfalen	Prof. Dr. Dr. h. c. Reimut Jochimsen	Präsident
	Jürgen von der Ahe	Vizepräsident
	Edgar Krug	
Rheinland- Pfalz	Dr. Heinrich Schreiner	Präsident
	Bolko Leopold	Vizepräsident
Saarland	Hans-Jürgen Koebnick	Präsident
	Dr. Erich Stoffers	Vizepräsident
Schleswig- Holstein	Werner Schulz	Präsident
	Peter Wilhelm Titzhoff	Vizepräsident

Inhalt

Teil A Allgemeiner Teil

Währung und Wirtschaft 1991

I. Das vereinigte Deutschland im gesamteuropäischen Wandlungsprozeß	1
II. Internationale Entwicklungen	3
1 Weltwirtschaftliches Umfeld	3
2 Fortschreitende Integration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6
3 Tiefgreifende Veränderungen in Mittel- und Osteuropa	11
III. Wirtschaftsentwickl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Notenbankpolitik	14
1 Die deutsche Wirtschaft unter dem Einfluß des Einigungsprozesses	14
2 Starke Anspannung der öffentlichen Finanzen	27
3 Außenwirtschaftliche Anpassung im Zuge der deutschen Vereinigung	33
4 Geldpolitik weiterhin stabilitätsorientiert	42
a. Erneute Straffung des geldpolitischen Kurses	42
b. Geldmengenziel und Zielrealisierung	46
c. Bestimmungsfaktoren des Geldmengen- wachstums	50
5 Hohe Flexibilität des Finanzsystems angesichts gestiegener Anforderungen	52
a. Ergiebiger Rentenmarkt	52
b. Verhaltene Entwicklung am Aktienmarkt	57
c. Deutsche Börsenlandschaft im Umbruch	59
d. Entwicklungen im Bankensektor	60
IV. Internationale Währungsentwicklung und Währungspolitik	62
1 Wechselkurse und Wechselkurspolitik	62
2 Internationale Finanzmärkte	66
3 Verschuldungssituation der Entwicklungs- länder und Osteuropas	68
4 IWF und internationale Entwicklungsbanken	72

Bankenaufsicht, kreditpolitische Regelungen, Begebung von DM-Auslandsanleihen und Währungsrecht

I. Mitwirkung der Deutschen Bundesbank bei der Bankenaufsicht und Änderungen des Bankenrechts	76
II. Die zur Zeit gültigen kreditpolitischen Regelungen der Deutschen Bundesbank	97
1 Diskontkredit	97
a. Rediskont-Kontingente für Kreditinstitute	97
b. Bundesbankfähige Wechsel	98
2 Lombardkredit	99
3 Geschäfte am offenen Markt	100
4 Mindestreservebestimmungen	101
Anweisung der Deutschen Bundesbank über Mindestreserven (AMR)	101

5	Mindestreservesätze und Zinssätze der Deutschen Bundesbank	108
III.	Erklärung der Deutschen Bundesbank zu DM-Auslandsemissionen	111
IV.	Währungsrechtliche Genehmigungen	113
Spezialaspekte der Integration des ostdeutschen Bankensystems		
I.	Bankenrecht und Bankenaufsicht	115
II.	Anpassungen im Zahlungsverkehr	119
III.	Kreditpolitische Regelungen	121
1	Diskontkredit	121
2	Lombardkredit	122
3	Geschäfte am offenen Markt	123

**Teil B
Erläuterungen
zum Jahres-
abschluß
der Deutschen
Bundesbank**

Jahresabschluß 1991		
1	Bilanz	125
2	Gewinn- und Verlustrechnung	141

Teil C

Fonds zum Ankauf von Ausgleichsforderungen	145
---	------------

Teil D

Bericht des Zentralbankrats	148
--	------------

**Anlagen zu
Teil B und C**

1	Jahresabschluß der Deutschen Bundesbank	
	Bilanz zum 31. Dezember 1991	152
	Gewinn- und Verlustrechnung für das Jahr 1991	154
2	Fonds zum Ankauf von Ausgleichsforderungen	155
3	Ausweise der Deutschen Bundesbank	156
4	Statistische Übersichten zum Zahlungsverkehr	161
5	Verzeichnis der Zweiganstalten und Filialen der Deutschen Bundesbank	164

Abgeschlossen am 2. April 1992

ISSN 0070-394 X

Nachdruck nur mit Quellenangabe gestattet

Teil A: Allgemeiner Teil

Währung und Wirtschaft 1991

I. Das vereinigte Deutschland im gesamteuropäischen Wandlungsprozeß

Die vereinigungsbedingten Herausforderungen im Innern und die weitreichenden Wandlungsprozesse im gesamteuropäischen Umfeld stellen die deutsche Volkswirtschaft vor bisher nicht gekannte Aufgaben. Scheinbar für lange Zeiten festgefügte Strukturen sind in Bewegung geraten. Der Gegensatz zwischen den Ländern und Ländergruppen mit früher fundamental unterschiedlichen Wirtschaftssystemen hat sich aufgelöst; ehemals getrennte Wirtschaftsräume entwickeln nun Beziehungen unter vergleichbaren marktwirtschaftlichen Bedingungen. Neue Prioritäten haben bislang etablierte Rangordnungen schlagartig in Frage gestellt und weitreichende Anpassungen in Wirtschaft und Politik erforderlich gemacht.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Herausforderungen . . .

Innerhalb Deutschlands ist der schwierige Verflechtungsprozeß zwischen dem Westen und Osten schon ein gutes Stück vorangekommen. Zu einer weiteren Angleichung der großen regionalen Unterschiede bedarf es allerdings vor allem einer nachhaltigen Stärkung der Produktivkräfte im Osten. Eine Grundvoraussetzung dafür ist die durchgängige politische und institutionelle Verankerung marktwirtschaftlicher Rahmenbedingungen auf allen Ebenen wirtschaftlichen Handelns. Doch das braucht Zeit. Ostdeutschland wird länger als ursprünglich erwartet auf die Hilfestellung aus dem Westen angewiesen bleiben. Ohne massive private und öffentliche Investitionen ist die Aufbauaufgabe nicht zu bewältigen. In einer Welt knapper Ressourcen erfordert dies, weniger dringliche Vorhaben im Westen zurückzustellen. Die Verteilungsspielräume in der alten Bundesrepublik sind enger geworden: Die herausragenden Aufgaben im Innern verlangen von allen gesellschaftlichen Gruppen ein hohes Maß an Disziplin und Anpassungsbereitschaft. Das gleiche gilt mit Blick auf den gesamteuropäischen Integrationsprozeß. So soll nach den Beschlüssen des Europäischen Rates in Maastricht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noch vor Ablauf dieses Jahrzehnts zu eine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ausgebaut werden. Das Zusammenspiel aller wirtschaftspolitischen Kräfte ist in den nächsten Jahren gefordert, um dieses Ziel unter stabilen Bedingungen zu erreichen und gleichzeitig die ökonomischen Voraussetzungen für den Beitritt weiterer Länder zu diesem europäischen Verbund zu schaffen. Darüber hinaus sind stabile und prosperierende Volkswirtschaften in Westeuropa auch wichtige Stützpfiler für die Reformstaaten Mittel- und Osteuropas. Diese sind auf eine nachhaltige Aufbauhilfe sowie offene und aufnahmefähige Auslandsmärkte angewiesen. Für den gesamteuropäischen Zusammenhalt ist es von großer Bedeutung, daß die Transformation in funktionsfähige Marktwirtschaften zu einem Erfolg wird.

. . . verlangen Anpassung an neue Prioritäten

Dem vereinigten Deutschland fällt in dem sich neu formierenden europäischen Kontinent eine wichtige Rolle zu. Zum einen ist es durch die Größe und Leistungskraft seiner Volkswirtschaft eines der Schlüsselländer im westeuropäischen Integrationsprozeß. Zum anderen trägt Deutschland gleichsam als „Schnittstelle“ des gesamteuropäischen Wandlungsprozesses eine besondere Verantwortung. Wirtschaftliche Fehlentwicklungen in Deutschland hätten unweigerlich negative Rückwirkungen auf die Partner im Westen und Osten. Im europäischen Gesamtinteresse gilt es deshalb für Deutschland, den unvermeidlichen Risiken der Integration und Transformation nicht noch eigene, hausgemachte Unsicherheitsfaktoren hinzuzufügen. Diese Aufgabe kann nur bewältigt werden, wenn im eigenen Land die Verteilungswünsche in Übereinstimmung mit den realen Möglichkeiten gebracht werden.

Höhere Verantwortung Deutschlands in Europa

Die deutsche Geldpolitik folgt seit langem dieser Grundlinie. Sie handelt damit nicht nur im nationalen, sondern auch im wohlverstandenen internationalen Interesse. Die D-Mark ist im freien Spiel der Marktkräfte zur weltwirtschaftlich bedeutendsten Währung nach dem US-Dollar geworden, und die deutsche Geldpolitik dient vielen europäischen Ländern innerhalb und außerhalb der EG als Orientierungspunkt für die eigenen Stabilitätsanstrengungen. Auch in die

Stabilitätsorientierte Geldpolitik im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Interesse

künftige Stabilität der D-Mark werden im In- und Ausland hohe Erwartungen gesetzt. Die in der laufenden Geldpolitik dazu erforderlichen Maßnahmen sind ihrer Natur nach freilich oft schmerzhaft und unpopulär. Das gilt in ganz besonderer Weise angesichts eines weltwirtschaftlichen Umfeldes, das 1991 über weite Strecken von einer Wachstumsabschwächung in wichtigen Partnerländern geprägt war. Mit einer kurzsichtigen „Aufweichung“ des geldpolitischen Kurses wäre auf Dauer für Wachstum und Beschäftigung nichts gewonnen, sondern möglicherweise sogar viel verloren worden. Gerade in einer Welt des schnellen und kaum vorhersehbaren Wandels kommt es statt dessen darauf an, mit einer stabilen Währung eine verlässliche Basis für ein spannungsfreies und anhaltendes Wirtschaftswachstum zu sichern.

III. Wirtschaftsentwickl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Notenbankpolitik

14

1. Die deutsche Wirtschaft unter dem Einfluß des Einigungsprozesses

Erster Schritt zur Angleichung der Lebensverhältnisse in West und Ost

Auf dem Weg zur Angleichung der Lebensverhältnisse in den beiden über vierzig Jahre getrennten Landesteilen ist Deutschland im Jahre 1991 einen ersten wichtigen Schritt vorangekommen. Vor allem ihre solide Konstitution und daneben ein erneutes starkes Wirtschaftswachstum verliehen der westdeutschen Wirtschaft bisher die Kraft dazu, den Umstrukturierungsprozeß in Ostdeutschland durch außergewöhnlich hohe öffentliche Transfers zu unterstützen und sozial abzufedern. Direkt oder indirekt brachte die durch diese Leistungen induzierte Nachfrage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für die Wirtschaft im alten Bundesgebiet positive Wachstumsimpulse, aber auch Stabilitätspolitisch negative Auswirkungen mit sich. In Ostdeutschland kam im Verlauf vergangenen Jahres allmählich eine Aufwärtsbewegung in Gang, die überwiegend auf die Initialzündung der westdeutschen Transferzahlungen zurückgeht; gleichzeitig zeigten sich erste Erfolge im Anpassungsprozeß. Der Lebensstandard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hat sich 1991 erheblich verbessert; auf der Schattenseite steht jedoch die hohe Unterbeschäftigung, die als schwere Erblast der sozialistischen Kommandowirtschaft zu werten ist.

In Westdeutschland nach kräftigem Wirtschaftswachstum Konjunkturabschwächung im Jahresverlauf

In Westdeutschland wuchs das reale Bruttosozialprodukt im Jahresdurchschnitt 1991 um gut 3%; das Bruttoinlandsprodukt nahm um knapp 3½% zu und damit kräftiger als das gesamtwirtschaftliche Produktionspotential, das demzufolge im Mittel noch etwas stärker ausgelastet war als schon 1990. Im Verlauf des vergangenen Jahres hat freilich der bis in die erste Hälfte hinein herrschende Nachfragedruck deutlich nachgelassen, so daß sich die Produktionsverhältnisse im zweiten Halbjahr mehr und mehr normalisiert haben. Der Kostendruck und in seinem Gefolge der Preisauftrieb haben allerdings erheblich zugenommen.

Exporteinbußen durch Nachfrageschub aus Ostdeutschland überkompensiert

Mit dem kräftigen Wachstum hob sich die westdeutsche Wirtschaft 1991 deutlich von der in vielen wichtigen Partnerländern herrschenden Konjunkturschwäche ab, die sich — teils Ursache, teils Folge dieser Schwäche — dort am ausgeprägtesten in einer rückläufigen Investitionstätigkeit niederschlug. Angesichts ihrer Angebotspalette bedeutete dies für die westdeutsche Exportwirtschaft entsprechend große Nachfrageeinbußen im Auslandsgeschäft. Von Ausfällen blieben aber auch die Hersteller von Grundstoff- und Produktionsgütern sowie von Verbrauchsgütern nicht verschont. Die im Verarbeitenden Gewerbe der alten Bundesländer eingegangenen Exportorders, deren Rückgang schon im Herbst 1990 eingesetzt hatte, unterschritten 1991 ihren Vorjahrsstand dem Werte nach um 5% und dem Volumen nach um 6%. Die westdeutsche Ausfuhr von Waren und Diensten in das Ausland war nominal nur wenig höher als 1990; real ist sie um gut 1% gesunken. Die Flaute im Exportgeschäft wurde, aufs ganze Jahr gesehen, durch den sprunghaften Anstieg der mittelbar oder unmittelbar mit westdeutschen Transferleistungen finanzierten Nachfrage aus Ostdeutschland mehr als ausgeglichen. Zu einem vergleichsweise großen Teil wurde der darin zum Ausdruck kommende Bedarf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freilich durch Rückgriff auf Importe gedeckt, deren drastische Zunahme maßgeblich zum Abbau des gesamten deutschen Leistungsbilanzüberschusses beitrug und damit in den Partnerländern zugleich ein willkommenes Gegengewicht zur eigenen Nachfrageschwäche bildete. Der reale Exportüberschuß Westdeutschlands von Waren und Diensten hat sich 1991 in einer Größenordnung von insgesamt etwa ¼% des Bruttosozialprodukts in konstanten Preisen erhöht. Dieses Ergebnis überdeckt freilich die unterschiedliche Konstellation in den beiden Jahreshälften 1991: Im ersten Halbjahr wurde die Schwäche im Auslandsgeschäft durch die nach dem Jahresbeginn zunächst noch sprunghaft steigende Nachfrage aus Ostdeutschland bei weitem überkompensiert;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gelang dies jedoch nicht mehr.

Grunddaten zur Wirtschaftsentwicklung in Westdeutschland

Position	Einheit	1988	1989	1990	1991	1988	1989	1990	1991
						Veränderung gegen Vorjahr in %			
Gesamtwirtschaftliche Nachfrage (real)									
Privater Verbrauch	Mrd DM	1 137,0	1 156,7	1 211,1	1 241,0	+ 2,7	+ 1,7	+ 4,7	+ 2,5
Staatsverbrauch	Mrd DM	389,1	382,6	390,5	393,5	+ 2,2	- 1,7	+ 2,1	+ 0,8
Anlageinvestitionen	Mrd DM	393,7	421,4	458,6	489,2	+ 4,6	+ 7,0	+ 8,8	+ 6,7
Ausrüstungen	Mrd DM	178,3	195,7	220,9	241,7	+ 6,6	+ 9,8	+ 12,9	+ 9,4
Bauten	Mrd DM	215,4	225,7	237,7	247,4	+ 3,1	+ 4,8	+ 5,3	+ 4,1
Vorratsinvestitionen	Mrd DM	+ 12,0	+ 21,9	+ 11,7	+ 11,1
Inländische Verwendung	Mrd DM	1 931,8	1 982,6	2 072,0	2 134,8	+ 3,6	+ 2,6	+ 4,5	+ 3,0
Außenbeitrag 1)	Mrd DM	+ 40,0	+ 64,2	+ 66,7	+ 71,1
Ausfuhr	Mrd DM	689,6	768,3	852,6	955,8	+ 5,9	+ 11,4	+ 11,0	+ 12,1
Einfuhr	Mrd DM	649,6	704,1	785,9	884,6	+ 5,8	+ 8,4	+ 11,6	+ 12,6
Bruttosozialprodukt in Preisen von 1985	Mrd DM	1 971,8	2 046,8	2 138,7	2 205,9	+ 3,7	+ 3,8	+ 4,5	+ 3,1
Nachrichtlich:									
Auftragseingang (Volumen) im Verarbeitenden Gewerbe 2)									
aus dem Inland	1985 = 100	107,8	116,5	122,1	122,6	+ 7,2	+ 8,1	+ 4,8	+ 0,5
aus dem Ausland	1985 = 100	107,5	115,9	125,6	130,7	+ 5,9	+ 7,8	+ 8,4	+ 4,0
Auftragseingang (Volumen) im Bauhauptgewerbe 2)	1985 = 100	108,2	117,4	116,2	109,5	+ 9,6	+ 8,5	- 1,0	- 5,8
Auftragseingang (Volumen) im Bauhauptgewerbe 2)	1985 = 100	110,5	122,4	132,6	137,5	+ 7,5	+ 10,8	+ 8,4	+ 3,6
Einkommensverteilung									
Einkommen aus unselbständiger Arbeit desgl. in % des Volkseinkommens	Mrd DM %	1 169,4 71,5	1 221,9 70,5	1 313,9 70,2	1 417,4 71,0	+ 4,0 .	+ 4,5 .	+ 7,5 .	+ 7,9 .
Einkommen aus Unternehmertätigkeit und Vermögen	Mrd DM	466,2	512,4	557,7	578,9	+ 9,6	+ 9,9	+ 8,8	+ 3,8
Nachrichtlich:									
Bruttoeinkommen der Produktionsunternehmen desgl. in % des Volkseinkommens	Mrd DM %	368,4 22,5	388,3 22,4	414,3 22,1	407,7 20,5	+ 11,8 .	+ 5,4 .	+ 6,7 .	- 1,6 .
Volkseinkommen	Mrd DM	1 635,5	1 734,3	1 871,6	1 996,2	+ 5,5	+ 6,0	+ 7,9	+ 6,7
Produktion									
Produktion im Produzierenden Gewerbe (ohne Bauhauptgewerbe) 2) 3)	1985 = 100	106,2	111,5	117,2	120,6	+ 3,6	+ 5,0	+ 5,1	+ 2,9
Produktion im Bauhauptgewerbe 2) 3)	1985 = 100	110,3	117,6	124,1	127,8	+ 4,3	+ 6,6	+ 5,5	+ 3,0
Bruttoinlandsprodukt in Preisen von 1985	Mrd DM	1 960,5	2 024,2	2 118,4	2 191,1	+ 3,7	+ 3,2	+ 4,7	+ 3,4
Beschäftigung									
Erwerbstätige Inländer	Mio	27,4	27,7	28,4	28,9	+ 0,8	+ 1,3	+ 2,6	+ 1,6
Nachrichtlich:									
Erwerbstätige im Inland	Mio	27,3	27,6	28,4	29,2	+ 0,8	+ 1,4	+ 2,9	+ 2,6
Arbeitslose	Tsd	2 241,6	2 037,8	1 883,1	1 689,4	+ 0,6	- 9,1	- 7,6	- 10,3
desgl. in % aller Erwerbspersonen	%	7,7	7,1	6,4	5,7
Preise und Löhne									
Preisindex für die Lebenshaltung aller privaten Haushalte	1985 = 100	101,4	104,2	107,0	110,7	+ 1,3	+ 2,8	+ 2,7	+ 3,5
Erzeugerpreisindex gewerblicher Produkte 4)	1985 = 100	96,3	99,3	101,0	103,4	+ 1,3	+ 3,1	+ 1,7	+ 2,4
Gesamtwirtschaftliches Baupreisniveau	1985 = 100	105,7	109,3	116,0	123,9	+ 1,9	+ 3,4	+ 6,1	+ 6,8
Index der Einfuhrpreise	1985 = 100	80,8	84,4	82,5	82,8	+ 1,3	+ 4,5	- 2,3	+ 0,4
Lohnkosten je Produkteinheit in der Gesamtwirtschaft 5)	1985 = 100	105,5	105,9	108,6	113,4	+ 0,2	+ 0,4	+ 2,5	+ 4,5
desgl. je Umsatzeinheit in der Gesamtwirtschaft 6)	1985 = 100	98,7	96,5	95,7	95,7	- 1,4	- 2,1	- 0,8	- 0,1
Nachrichtlich:									
Produktivität 7)	1985 = 100	107,3	110,8	113,7	116,5	+ 3,6	+ 3,2	+ 2,6	+ 2,5
Gesamtwirtschaftliches Tariflohn- und -gehaltsniveau auf Monatsbasis	1985 = 100	110,0	112,9	118,1	125,4	+ 2,7	+ 2,7	+ 4,6	+ 6,2
auf Stundenbasis	1985 = 100	111,7	115,9	122,5	130,8	+ 3,3	+ 3,7	+ 5,7	+ 6,8

1 Saldo des Waren- und Dienstleistungsverkehrs mit dem Ausland; Lieferungen nach bzw. Bezüge aus Ostdeutschland (einschl. Direktkäufe privater Haushalte in West- bzw. Ostdeutschland) werden hier anders als in der Zahlungsbilanzstatistik der Aus- bzw. Einfuhr zugerechnet. - 2 Arbeitstägig bereinigt. - 3 Ergebnisse für fachliche Unternehmensteile. - 4 Im Inlandsabsatz. - 5 Quotient aus dem Index der Bruttoeinkommen aus unselbständiger Arbeit je Beschäftigten und dem Index des realen Bruttosozialprodukts je Erwerbstätigen. - 6 Quotient aus dem Index der

Bruttoeinkommen aus unselbständiger Arbeit je Beschäftigten und dem Index des nominalen Sozialprodukts je Erwerbstätigen. - 7 Bruttosozialprodukt in Preisen von 1985 je geleisteter Arbeitsstunde; eigene Berechnung.

Die Angaben aus den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sowie die Angaben über Erwerbstätige sind ab 1989 vorläufig. Differenzen in den Summen durch Runden der Zahlen.

BBK

Lebhafte Verbrauchskonjunktur

Das kräftige Wachstum der westdeutschen Wirtschaft im gesamten Jahr 1991 beruhte auch auf inneren Antriebskräften. Dazu zählte der Private Verbrauch, der von der Einkommens- und Beschäftigungsentwicklung her stimuliert wurde. In der Tarifrunde 1991 wurden Lohnabschlüsse vereinbart, die im Schnitt mit insgesamt 7% (auf Stundenbasis) weit über die Lohnerhöhungen der vorangegangenen Jahre hinausgingen; nach ihrem vollen Wirksamwerden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lösten sie einen sprunghaft steigenden Lohnkostendruck aus und führten damit auch dazu, daß sich die im Jahresmittel außerordentlich kräftige Beschäftigungsausweitung in den letzten Monaten des Jahres abschwächte. Insgesamt nahm das Verfügbare Einkommen der westdeutschen privaten Haushalte 1991 um 6% zu. Ein großer Teil der Kaufkraft dieses Einkommens wurde allerdings durch den verstärkten Geldwertschwund aufgezehrt, der durch die hohen Lohnsteigerungen mitverursacht war. Ihre Verbrauchsausgaben weiteten die Konsumenten in den westlichen Bundesländern nominal um 6% aus; real betrachtet, waren es 2½%. Die Einzelhandelsumsätze sind allerdings wesentlich stärker gestiegen. Dafür spielte eine Rolle, daß die ostdeutschen privaten Haushalte ihren Bedarf in erheblichem Umfang durch Direktkäufe im alten Bundesgebiet deckten. Hinter den Ergebnissen für das gesamte Jahr stehen freilich deutliche Unterschiede in der Verbrauchskonjunktur im Verlauf vorigen Jahres. Das erste Halbjahr war durch eine anhaltend kräftige Expansion der privaten Konsumausgaben geprägt; in der zweiten Hälfte wirkte hingegen das zur Jahresmitte in Kraft getretene Steuerprogramm tendenziell dämpfend auf den Privaten Verbrauch: Die Erhebung des Solidaritätszuschlags minderte das Verfügbare Einkommen; die Anhebung indirekter Steuern und Gebühren schlug sich in höheren Preisen, zum Beispiel für Kraftstoffe, nieder und verringerte so die Kaufkraft der Einkommen. Nur zum Teil wurde all dies dadurch ausgeglichen, daß die privaten Haushalte in der zweiten Hälfte letzten Jahres – gemessen als Anteil am Verfügbaren Einkommen – weniger sparten als im ersten Halbjahr. Im gesamten Jahr 1991 blieb ihre Sparquote mit 14½% jedoch ebenso hoch wie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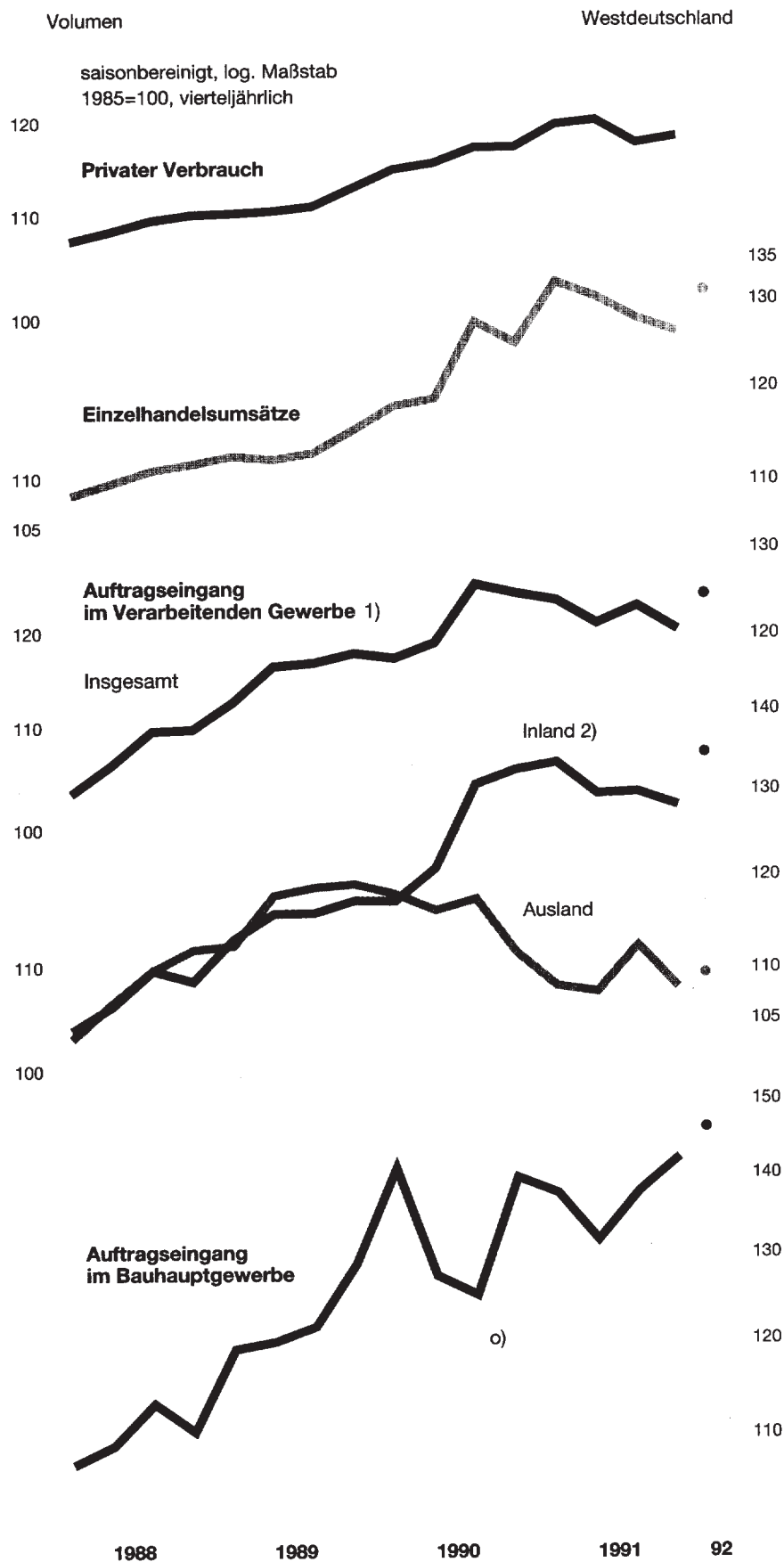
Erneute kräftige Zunahme der Anlageinvestitionen

Zu den Wachstumsträgern des Jahres 1991 sind in vorderster Linie die Bruttoanlageinvestitionen zu rechnen. Die Produktionsunternehmen gaben für Ausrüstungen und Bauten insgesamt 13% mehr aus als ein Jahr zuvor; real entsprach dies einer Zunahme um gut 8½%. Die kräftige Steigerung der Unternehmensinvestitionen ist zum guten Teil ein Spiegelbild der bis weit in das Jahr hinein günstigen Konjunkturlage in Westdeutschland. Nicht zuletzt infolge zusätzlicher Absatzchancen in Ostdeutschland waren Kapazitätserweiterungen erforderlich, die sich unter anderem im recht kräftigen Anstieg der gewerblichen Bauinvestitionen niedergeschlagen haben. Allerdings hat sich gegen Ende letzten Jahres insbesondere unter dem Einfluß des starken Lohnkostendrucks und verschlechterter Absatzperspektiven die Investitionsbereitschaft der westdeutschen Unternehmen abgeschwächt, worauf unter anderem der Rückgang der Auftragseingänge bei den heimischen Investitionsgüterherstellern und im gewerblichen Bau im letzten Quartal 1991 hindeutet.

Rege Wohnungsbautätigkeit

Die lange anhaltende Expansion gewerblicher Bauaufträge hat maßgeblich zur insgesamt sehr günstigen Baukonjunktur im vergangenen Jahr beigetragen. Ihre Hauptantriebskraft war jedoch die erneute beträchtliche Zunahme der Nachfrage nach Wohnungsbauleistungen. Im Gefolge des Nachfragedrucks in dieser Bausparte wurden in den ersten elf Monaten vorigen Jahres fast 20% mehr Wohnungen fertiggestellt als zur gleichen Vorjahrszeit. Dieses außerordentlich positive Ergebnis kam auch dadurch zustande, daß sich innerhalb der Wohnungsbautätigkeit die Gewichte weiter zum Geschoßwohnungsbau hin verschoben haben. Angesichts umfangreicher staatlicher Förderprogramme scheint insbesondere der Miet- bzw. Eigentumswohnungsbau, wie die Entwicklung in diesen Bereichen vermuten läßt, gegen die dämpfende Wirkung höherer Zinsen weitgehend abgeschottet zu sein. Unter dem Einfluß wachsen-

Nachfragetendenzen



1) Ohne Nahrungs- und Genussmittelgewerbe.- 2) Seit jeher einschl. der Aufträge aus Ostdeutschland.- o) Ab Oktober 1990 einschl. der Aufträge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an westdeutsche Baubetriebe.- ● = Januar 1992.

der Finanzierungskosten, einer erheblichen Verteuerung von Bauleistungen und stark steigender Grundstückspreise neigte der Eigenheimbau dagegen 1991 eher zur Schwäche.

Relativ starke Ausweitung des Produktionspotentials auch durch Zustrom von Arbeitskräften aus Ostdeutschland

Zum guten Teil einigungsbedingt hat sich 1991 wie schon 1990 das Produktionspotential der westdeutschen Wirtschaft stärker vergrößert als in den Jahren zuvor. Zum einen war dies eine Folge der günstigen Investitionskonjunktur, die dazu führte, daß das Produktivvermö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rneut sehr kräftig wuchs. Zum anderen spielte aber auch der anhaltende Zustrom von Arbeitskräften aus Ostdeutschland eine Rolle; im Vergleich zu 1990 siedelten zwar – wie die spärlichen Anhaltspunkte vermuten lassen – weniger Erwerbspersonen nach Westdeutschland über, jedoch waren im Durchschnitt des vorigen Jahres weitaus mehr Pendler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im alten Bundesgebiet beschäftigt. Bei diesen Erwerbspersonen handelt es sich offenbar zum guten Teil um qualifizierte Arbeitskräfte, die in den vorangegangenen Aufschwungjahren zusehends zu einem Engpaßfaktor im Wachstumsprozeß der Wirtschaft im westlichen Teil Deutschlands geworden waren. Insgesamt ist das westdeutsche reale Produktionspotential nach unserer Rechnung 1991 um nahezu 3% gestiegen (gegenüber rund 2% in den Jahren 1983/89). Angesichts einer Zunahme des Bruttoinlandsprodukts um knapp 3½% hat die zuvor schon hohe Auslastung des Produktionspotentials im Mittel des Jahres 1991 also nochmals, wenn auch nur leicht, zugenom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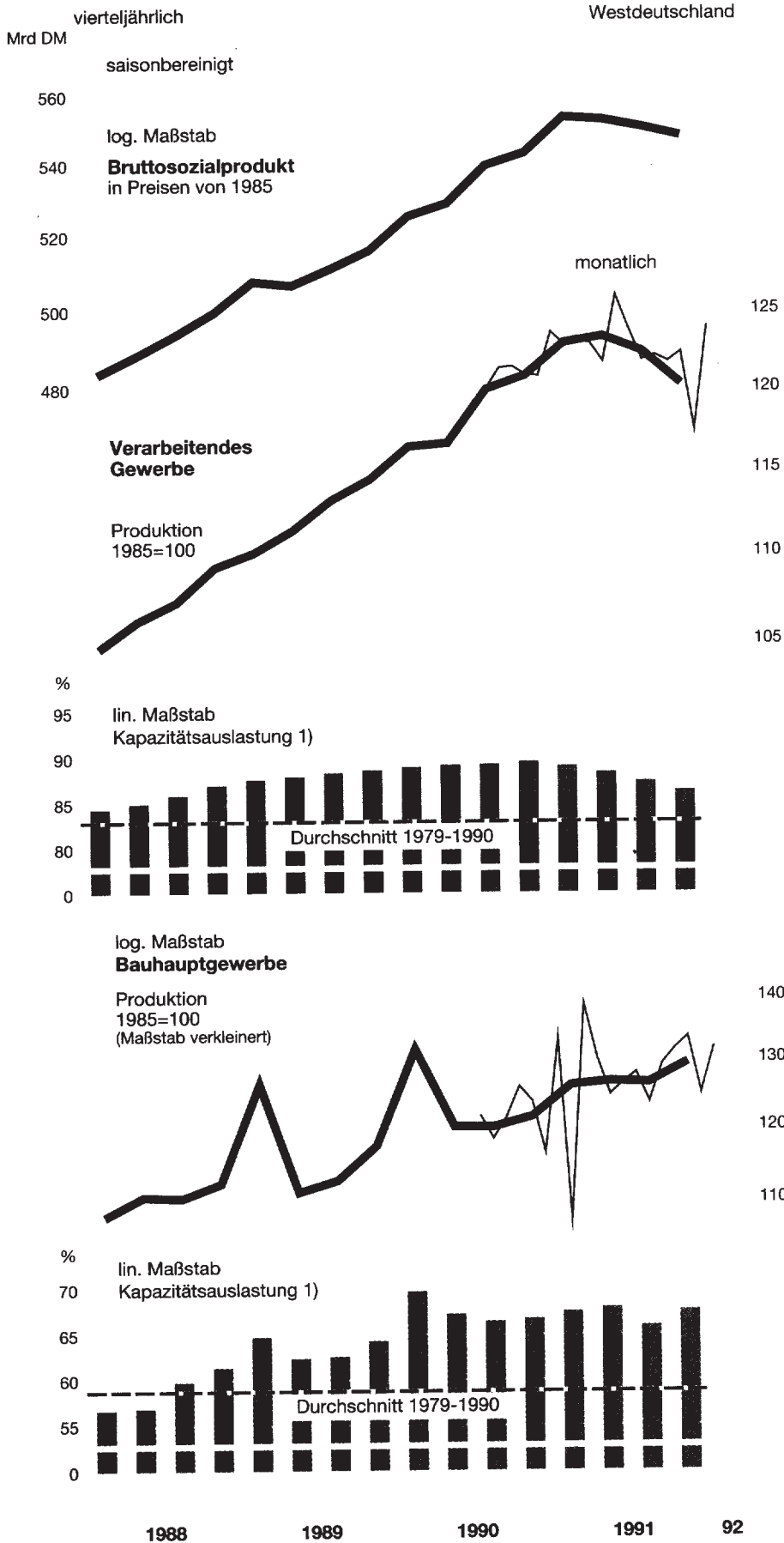
Hohe, im Jahresverlauf nachlassende Auslastung der Kapazitäten

Im Laufe des vergangenen Jahres ließ die starke Beanspruchung der Produktivkräfte allerdings in weiten Teilen der Wirtschaft nach. Insbesondere im Verarbeitenden Gewerbe haben sich die Produktionsverhältnisse normalisiert. Aufs ganze Jahr gesehen, hat die Industrie ihre Erzeugung um 3% ausgeweitet; in der zweiten Hälfte blieb die Fertigung saisonbereinigt jedoch deutlich hinter dem Stand des ersten Halbjahres zurück. Dem Ifo-Konjunkturtest zufolge waren die betrieblichen Kapazitäten im Verarbeitenden Gewerbe Ende 1991 spürbar weniger ausgelastet als noch um den Jahresbeginn, sie blieben damit aber immer noch wesentlich stärker beansprucht als im langjährigen Durchschnitt 1979/90. Im Gegensatz zur Industrie waren die Produktivkräfte in der Bauwirtschaft – dem in diesem Bereich anhaltenden Nachfragedruck entsprechend – das ganze Jahr 1991 über erheblich angespannt.

Beträchtliche Beschäftigungssteigerung, rückläufige Arbeitslosigkeit

Im Zuge der insgesamt kräftigen Produktionsausweitung hat die Zahl der Erwerbstätigen 1991 erneut in ungewöhnlich großem Umfang zugenommen. Im Mittel vorigen Jahres waren in Westdeutschland mit 29,2 Millionen fast 750 000 oder gut 2½% mehr Personen beschäftigt als im Jahr zuvor. Davon kam ein beträchtlicher Teil aus dem Osten Deutschlands, sei es als Einpendler, sei es durch Wohnortwechsel. Aber auch Aussiedler, deren Anzahl 1990 stark zugenommen hatte und die demzufolge nach der Teilnahme an Sprachkursen und beruflichen Qualifizierungsmaßnahmen 1991 vermehrt für den Arbeitsmarkt verfügbar waren, hatten an dem ungewöhnlich starken Beschäftigungswachstum teil. Insbesondere der Dienstleistungssektor stockte seinen Personalbestand in großem Umfang auf (darunter auch die öffentliche Hand); gleiches gilt für weite Teile des Handwerks, in dem das Angebot gut qualifizierter Fachkräfte vor allem aus Ostdeutschland zu einer vergleichsweise kräftigen Ausweitung der Mitarbeiterzahl genutzt wurde. Dies trifft auch für den Baubereich zu. Im Verarbeitenden Gewerbe waren im Schnitt vorigen Jahres ebenfalls erheblich mehr Erwerbspersonen beschäftigt als 1990. Die hohe Nachfrage nach Arbeitskräften hat sich überdies auch in einem beachtlichen Rückgang der Arbeitslosigkeit niedergeschlagen, die im Jahresdurchschnitt mit 1,69 Millionen betroffenen Personen um rund 200 000 unter dem Vorjahrsergebnis und um 600 000 unter dem Höchststand des Jahres 1985 lag. Um die Jahreswende 1991/92 hat die Zahl der Erwerbstätigen nur noch wenig zugenommen; die Arbeitslosigkeit verharrte auf dem zuvor erreichten Stand.

Produktion



1) Ergebnisse des Ifo-Konjunkturtests.

Zur Lage am Arbeitsmarkt in Westdeutschland						
in Tsd						
Position	1988	1989	1990	1991	1990	1991
	Jahresdurchschnitt				Veränderung gegen Vorjahr	
Beschäftigung						
Erwerbstätige Inländer p)	27 366	27 733	28 444	28 886	+ 711	+ 442
Pendlersaldo p)	- 105	- 102	- 11	+ 287	x	x
Erwerbstätige im Inland p)	27 261	27 631	28 433	29 173	+ 802	+ 740
darunter:						
sozialversicherungs- pflichtig Beschäftigte 1)	21 265	21 619	22 368	23 173	+ 749	+ 805
Verarbeitendes Gewerbe	8 188	8 329	8 553	8 743	+ 224	+ 190
Baugewerbe	1 412	1 406	1 468	1 521	+ 62	+ 53
Handel, Verkehr, Nachrichtenübermittlung	3 907	3 979	4 151	4 390	+ 172	+ 239
Kreditinstitute, Versicherungsgewerbe	856	870	891	919	+ 21	+ 28
übrige Dienstleistungen	6 204	6 359	6 637	6 939	+ 278	+ 302
Kurzarbeiter	208	108	56	145	- 52	+ 89
Offene Stellen	189	251	314	331	+ 63	+ 17
Arbeitslose	2 242	2 038	1 883	1 689	- 155	- 194
Nachrichtlich: Arbeitslosenquote in % 2)	7,7	7,1	6,4	5,7	x	x
Struktur der Arbeitslosigkeit	Stand Ende September					
Arbeitslose insgesamt	2 100	1 881	1 728	1 610	- 153	- 118
nach Geschlecht						
Männer	1 074	951	870	839	- 81	- 31
Frauen	1 026	930	858	771	- 72	- 87
Nach Nationalität						
Deutsche	1 837	1 663	1 536	1 403	- 127	- 133
darunter:						
Aussiedler	73	106	155	134	+ 49	- 21
Übersiedler	10	45	75	32	+ 30	- 43
Ausländer	262	218	192	207	- 26	+ 15
nach Berufsausbildung						
ohne abgeschlossene Ausbildung	1 024	887	808	762	- 79	- 46
mit abgeschlossener Ausbildung	1 075	993	920	848	- 73	- 72

1 Stand jeweils 30. Juni. — 2 Arbeitslose in % aller Erwerbspersonen. — p Ab 1989 vorläufig. BBk

Beschleunigter Preisauftrieb

Der Preisauftrieb hat sich in Westdeutschland im Laufe des vorigen Jahres erheblich beschleunigt. Dies war wohl — teils mittelbar, teils unmittelbar — eine Spätfolge der Überforderung der Produktivkräfte, zu der der einigungsbedingte Nachfrageschub 1990/91 geführt hat, nachdem bereits zuvor in dem seit 1983 währenden Aufschwung die Ressourcen immer stärker beansprucht worden waren. Die noch Anfang letzten Jahres boomartige Wirtschaftslage war einer der Auslöser für die hohen Lohnabschlüsse der letztjährigen Tarifrunde, die — wie bereits erwähnt — maßgeblich zum verstärkten Preisauftrieb beigetragen haben. Darüber hinaus sind im Zusammenhang mit den fiskalischen Kosten der Einigung zur Jahresmitte einige indirekte Steuern angehoben worden, was ebenfalls einen kräftigen Teuerungsschub nach sich zog.

Fortdauernde Stabilitätsimporte

Von außen wurde 1991 tendenziell Stabilität importiert. Vor allem wohl infolge der weltweiten Konjunkturschwäche sanken auf den internationalen Märkten die Dollarnotierungen für Rohstoffe und Rohöl insgesamt beträchtlich; bei im Jahresdurchschnitt wenig verändertem Kurs des US-Dollars haben sich Importe dieser Güter, in D-Mark gerechnet, erheblich verbilligt. Die Konjunkturlaute in wichtigen Partnerländern hielt zudem die Teuerung eingeführter Industrieerzeugnisse in relativ engen Grenzen. Alles in allem sind die Importpreise im Schnitt vergangenen Jahres kaum gestiegen (+ 1/2 %); Ende 1991 waren sie um knapp 3% niedriger als ein Jahr zuvor, im Februar 1992 noch um gut 1%.

Die Entlastungen von außen bremsten den Preisauftrieb im Innern. Teils resultierte für die heimischen Unternehmen daraus – zusammen mit dem verstärkten Wettbewerb auf den Binnenmärkten – eine Verminderung der Überwälzungsmöglichkeiten, so daß die hausgemachten Kostensteigerungen um so mehr zu Lasten der Gewinnmargen gingen. Teils bedeuteten niedrigere Einfuhrpreise etwa für Rohstoffe aber auch für die Unternehmen in ihrer Kalkulation ein Gegengewicht zu den internen Kostenerhöhungen. Auf der industriellen Erzeugerstufe waren 1991 gewerbliche Produkte um 2½% teurer als ein Jahr zuvor (wozu auch die bereits erwähnte Anhebung indirekter Steuern beitrug). Die Verbraucherpreise waren im Schnitt um 3½% höher als 1990; auch wenn man berücksichtigt, daß davon nicht ganz ½ Prozentpunkt auf die zur Jahresmitte wirksam gewordenen fiskalischen Maßnahmen zurückzuführen war, fiel damit der Preisanstieg so stark aus wie seit 1983 nicht mehr. Im März 1992 überschritt der Preisindex für die Lebenshaltung seinen Vorjahrsstand – ersten Ergebnissen aus einzelnen alten Bundesländern zufolge – um reichlich 4½%. Sehr viel mehr als Konsumgüter, nämlich um 7%, haben sich im vergangenen Jahr Bauleistungen unter dem Einfluß anhaltenden Nachfrage-drucks und beträchtlich steigender Kosten verteuert.

Die Gefahren für den Geldwert bestehen 1992 weiter. Überdies zeichnen sich aber auch Risiken für Wachstum und Beschäftigung ab. Die erhoffte konjunkturelle Belebung in wichtigen Partnerstaaten ist bisher ausgeblieben und – vor allem mit dem Wirksamwerden der in den USA, Japan und Großbritannien geplanten bzw. bereits getroffenen finanzpolitischen Stimulierungsmaßnahmen – derzeit wohl erst für die zweite Hälfte dieses Jahres zu erwarten. Dementsprechend ist – entgegen vielen Prognosen vom Herbst letzten Jahres – zunächst nicht mit einer raschen Überwindung der Schwäche im Auslandsgeschäft zu rechnen. Von daher bleiben die Wachstumsperspektiven für 1992 gedämpft. Dies gilt um so mehr angesichts der Tatsache, daß das reale Bruttosozialprodukt im vierten Quartal 1991 saison- und kalenderbereinigt um gut ½ Prozentpunkt niedriger als im Jahresdurchschnitt war, der Start in das neue Jahr von dieser Seite her also recht ungünstig ist. Freilich ruhen die Wachstumshoffnungen der westdeutschen Wirtschaft nicht allein auf den Ausfuhren. Vielmehr ist in diesem Zusammenhang auch auf interne konjunkturelle Antriebskräfte und insbesondere auf eine weiter steigende Nachfrage aus Ostdeutschland zu verweisen. Seit dem Eintritt der ehemaligen DDR in di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mit der Bundesrepublik haben die staatlichen Transfers in die neuen Bundesländer sprunghaft zugenommen – und in deren Gefolge ist auch die Kaufkraft in Ostdeutschland gestiegen. Im Jahre 1992 werden diese Transfers weiter wachsen; zusätzlich wird privates Kapital verstärkt in das Beitrittsgebiet fließen. Zwar produziert die ostdeutsche Wirtschaft wohl inzwischen mehr für den eigenen Markt, so daß möglicherweise der Bedarf der Bevölkerung insbesondere an Konsumgütern mehr als in den vergangenen anderthalb Jahren durch Erzeugnisse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gedeckt werden kann. Auf der anderen Seite dürften aber mit einem beschleunigten Neuaufbau des ostdeutschen Produktionsapparates die Bezüge von Investitionsgütern aus Westdeutschland erheblich steigen. Per saldo bedeutet dies voraussichtlich ein weiteres Wachstum der Nachfrage aus Ostdeutschland. Ein expansiver Impuls auf die westdeutsche Binnenkonjunktur zeichnet sich darüber hinaus für die Zeit nach der Jahresmitte 1992 ab, wenn die Erhebung des Solidaritätszuschlags entfällt; von der damit verbundenen Stärkung des verfügbaren Einkommens der privaten Haushalte in West- und in Ostdeutschland ist eine Anstoßwirkung vor allem auf die Konsumausgaben zu erwarten. Überdies gehen expansive Effekte von der anhaltenden Steigerung der Nachfrage im Wohnungsbau a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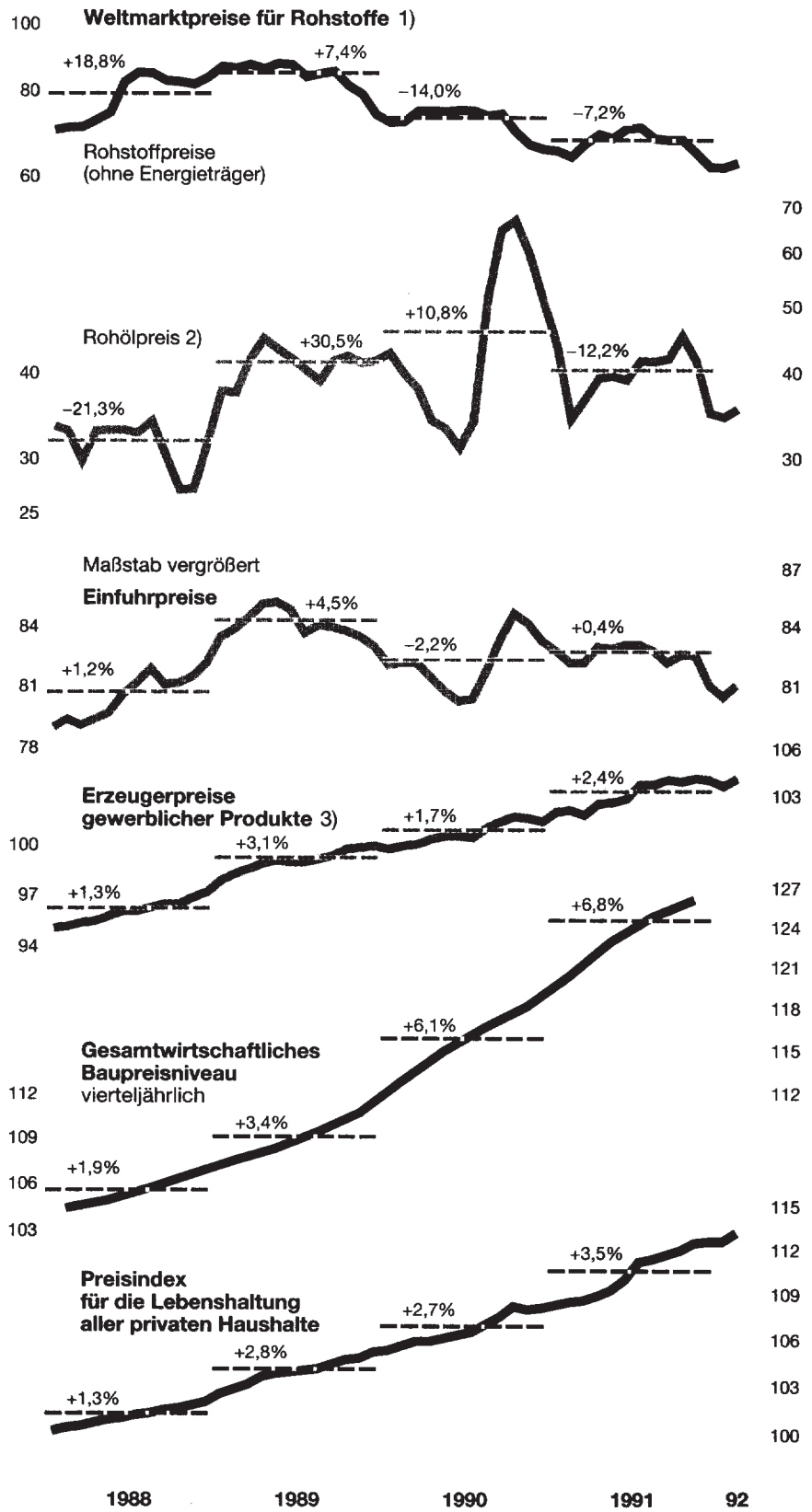
Höchster Verbraucherpreisanstieg seit 1983

Im Jahre 1992 weiterhin Gefahren für den Geldwert, aber auch Risiken für Wachstum und Beschäftigung . . .

Preise

1985 = 100, saisonbereinigt, log. Maßstab

--- Jahresdurchschnitt mit
Veränderung gegen Vorjahr in %



1) HWWA-Index der Rohstoffpreise; DM-Basis.- 2) Nicht saisonbereinigt.- 3) Inlandsabsatz.

Freilich stehen die geschilderten Nachfrageperspektiven unter dem Vorbehalt angemessener lohnpolitischer Entscheidungen in der laufenden Tarifrunde. Im Jahre 1992 ist der Verteilungsspielraum weitaus enger als in den vergangenen Jahren. Überzogene Lohnabschlüsse bedeuten nicht nur eine weitere Gefährdung des Stabilitätsziels (und zwar möglicherweise über das Jahr 1992 hinaus), sondern sie könnten auch die Nachfrageentwicklung erheblich beeinträchtigen. Ein steigender Druck auf die Gewinnmargen der Unternehmen würde vor allem die Investitionsbereitschaft noch zusätzlich schwächen, was auf andere Nachfragekomponenten und damit letztlich auch auf Wachstum und Beschäftigung ausstrahlen dürfte.

... insbesondere im Falle überzogener Lohnabschlüsse

Die ostdeutsche Wirtschaft hat im vorigen Jahr eine erste schwierige Etappe auf dem langen dornigen Weg zu einer voll funktions- und wettbewerbsfähigen Marktwirtschaft hinter sich gebracht. Im Verlauf des letzten Jahres gi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ie dramatische wirtschaftliche Talfahrt zu Ende, und eine Besserung trat ein. Zwar hat nach unserer Einschätzung schon gegen Ende 1990 die Produktion in einigen Bereichen der ostdeutschen Wirtschaft zugenommen, so in Teilen des privaten Dienstleistungssektors und insbesondere des Handwerks. Nach dem Jahreswechsel 1990/91 setzte sich die Aufwärtsbewegung in diesen Bereichen fort. Gleichwohl war die Produktionsleistung insgesamt zunächst rückläufig; denn in zwei gewichtigen Sektoren – im Verarbeitenden Gewerbe, das im Anpassungsprozeß an marktwirtschaftliche Bedingungen dem größten Druck zur Umstrukturierung unterliegt, und in der Bauwirtschaft – hielten die Nachfrage- und Produktionseinbußen noch einige Zeit an. Im Frühjahr setzte im Baubereich ein Umschwung ein, zu dem die Initialzündung unmittelbar oder mittelbar von den westdeutschen Transferzahlungen ausging. Zunächst vergab die öffentliche Hand in von Monat zu Monat sprunghaft steigendem Umfang Aufträge an das Bauhauptgewerbe; im Dezember des letzten Jahres waren diese (nicht saisonbereinigt) fast dreimal so hoch wie im Januar/Februar 1991. Dem folgte eine bis zuletzt in der Tendenz immer lebhafter werdende Ordertätigkeit im gewerblichen Bau. In den Herbstmonaten zog schließlich auch die Nachfrage im Wohnungsbau an. Insgesamt übertrafen die Bauaufträge Ende 1991 ihren Stand vom Jahresbeginn (nicht saisonbereinigt) um über 100%. Trotz kräftiger, vor allem wohl durch den hohen Lohnkostenanstieg verursachter Verteuerung von Bauleistungen bedeutet dies auch real ein außerordentlich starkes Wachstum. Informationen über die Bauproduktion sind derzeit nicht verfügbar. Die Entwicklung der im Bauhauptgewerbe geleisteten Arbeitsstunden deutet jedoch darauf hin, daß die Fertigung im Verlauf vergangenen Jahres stark zugenommen ha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ginn einer Aufwärtsbewegung im Laufe des Jahres 1991

Die Nachfrage nach ostdeutschen Industrieerzeugnissen war nach dem Eintritt der ehemaligen DDR in di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vor allem aus zwei Gründen drastisch gesunken: Mit der DM-Einführung und dem damit verbundenen Zugang zum westlichen Güterangebot hat die Bevölk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ie Käufe von im allgemeinen (aber nicht in jedem Einzelfall) weniger wettbewerbsfähigen eigenen Erzeugnissen stark eingeschränkt. Überdies schwächte sich das Auslandsgeschäft mit den traditionellen Partnern der ostdeutschen Wirtschaft in den ehemaligen RGW-Staaten nach Zusammenbruch des Transferrubel-Systems zur Jahreswende 1990/91 stark ab. Der aus all dem resultierende massive Nachfrageausfall hatte einen rapiden Niedergang der Industrieproduktion zur Folge, der erst in den Frühjahrsmonaten 1991 zum Stillstand kam. Seither bewegt sich die Erzeugung des Verarbeitenden Gewerbes – freilich unter erheblichen Schwankungen – auf dem zuvor erreichten niedrigen Niveau. Daß die Talfahrt gestoppt wurde, ist in gewissem Umfang auch staatlichen Maßnahmen zuzuschreiben, mit denen beispielsweise die Auslandsnachfrage gestützt wird. Überdies scheint sich – wie erwähnt – auch die ostdeutsche Bevölkerung allmählich wieder stärker eigenen, inzwischen wettbewerbsfähiger gewordenen Produkten zuzuwenden.

Ende des rapiden Niedergangs der Industrieproduktio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sgewählte Wirtschaftszahlen für Ostdeutschland*)						
Position	Einheit	1991				1992
		1. Vj.	2. Vj.	3. Vj.	4. Vj.	Jan./Febr. 92)
Produzierendes Gewerbe						
Verarbeitendes Gewerbe						
Auftragseingang 1)	2. Hj. 1990 = 100	80	75	79	83	
	% gegen Vorperi- ode	— 14,0	— 6,3	5,3	5,1	
Nettoproduktion 1) 2)	3. Q. 1990 = 100	66	61	65	65	
	% gegen Vorperi- ode	— 23,3	— 7,6	6,6	± 0	
Umsatz	2. Hj. 1990 = 100	51,7	52,4	53,9	61,7	
Bauhauptgewerbe 3)						
Auftragseingang 1)	2. Hj. 1990 = 100	100	121	165	190	
	% gegen Vorperi- ode	— 11,5	21,0	36,4	15,2	
Geleistete Arbeitsstunden 4)	Mio Stunden	23,2	27,1	28,4	28,1	
Umsatz 5)	Mrd DM	1,1	1,7	2,0	2,6	
Arbeitsmarkt						
Beschäftigte 6)						
Verarbeitendes Gewerbe	1000	7) 1 923,2	1 846,8	1 547,6	1 332,8	
Bauhauptgewerbe	1000	7) 288,2	284,9	274,0	280,0	
Ausbaugewerbe	1000	7) 58,8	59,9	61,6	66,1	
Arbeitslose	1000	756,5	834,9	1 022,5	1 037,5	1 253,7
Arbeitslosenquote 8)	%	8,6	9,5	11,6	11,8	9) 16,7
Kurzarbeiter	1000	1 925,8	1 962,1	1 464,3	1 112,6	519,7
Beschäftigte in ABM 10)	1000	40,9	101,3	234,1	357,0	394,4
Eintritte in berufliche Weiterbildung 11)	1000	138,7	223,7	259,4	270,2	12) 180,3
Bezieher von Altersübergangsgeld	1000		133,9	205,3	305,2	450,7
Preise						
Preisindex für die Lebenshaltung 13)	2. Hj. 1990/ 1. Hj. 1991 = 100	103,2	105,5	106,9	117,8	14) 118,8
	% gegen Vorjahr			13,3	21,5	14) 15,9

* Ursprungswerte; Vierteljahreswerte: Monatsdurchschnitte. — ° Durchschnitt. — 1 Schätzungsweise mit westdeutschen Saisonfaktoren bereinigt. — 2 Index für fachliche Unternehmensteile. — 3 Betriebe mit 20 und mehr Beschäftigten. — 4 Von Inhabern, Angestellten, Arbeitern und Auszubildenden auf Baustellen und Bauhöfen tatsächlich geleistete Arbeitsstunden. — 5 Baugewerbliche Umsätze ohne Mehrwertsteuer. — 6 Betriebe mit 20 und mehr Beschäftigten. Einschließlich tätiger Inhaber, Mitinhaber und unbezahlt mithelfender Familienangehöriger sowie einschließlich Kurzarbeiter mit einem Arbeitsausfall bis zu 100%. — 7 Durchschnitt Februar/März. — 8 Arbeitslose in % der abhängigen zivilen Erwerbspersonen; ab Januar 1992 berechnet auf Basis neuer Erwerbspersonenzahlen. — 9 Durchschnitt Februar. — 10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 11 Quartalssumme. — 12 Summe. — 13 Alle Arbeitnehmerhaushalte. — 14 Januar 1992. BBK

Große Kluft zwischen
Einkommen und
Nachfrage einerseits
sowie Produktion
andererseits

Mit der Stabilisierung im Verarbeitenden Gewerbe und der Aufwärtsbewegung in der Bauwirtschaft dürfte die gesamte ostdeutsche Produktion, d. h. letztlich das reale Bruttosozialprodukt,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1991 nach Ausschaltung jahreszeitlich bedingter Unterschiede höher als im ersten Halbjahr gewesen sein. Ergebnisse der Sozialproduktsberechnung durch das Statistische Bundesamt liegen freilich bisher nur für die zweite Hälfte 1990 und für das gesamte Jahr 1991 in jeweiligen Preisen vor. Danach machte das ostdeutsche nominale Bruttosozialprodukt im vorigen Jahr mit 193 Mrd DM knapp 7½ % des westdeutschen und nicht ganz 7 % des gesamtdeutschen Sozialprodukts aus. Je Einwohner gerechnet, erreichte e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rund 30 % des westdeutschen und rund 35 % des gesamtdeutschen Vergleichsniveaus. Freilich vermittelt diese Betrachtung ein höchst unzutreffendes Bild der Einkommens- oder Wohlstandsunterschiede. Denn — den Ergebnissen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zufolge — waren Einkommen und

Nachfrage in Ostdeutschland fast doppelt so hoch wie das erwirtschaftete Sozialprodukt. An dieser großen Kluft wird zum einen die Bedeutung der westdeutschen Transferzahlungen für die Wirtschaf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utlich. Zum anderen läßt sich daran aber auch erkennen, wieviel mehr an Gütern und damit an Produktion über die eigenen erbrachten Leistungen hinaus 1991 in Ostdeutschland nachgefragt wurde. Inwieweit diese Lücke durch ein vermehrtes Angebot aus Ostdeutschland geschlossen werden kann, hängt maßgeblich von der Wettbewerbsfähigkeit der ostdeutschen Unternehmen und damit weitgehend von der Lohnentwicklung und den Investitionen ab. Das Bestreben einer möglichst raschen Angleichung der Ost- an die Westlöhne und -gehälter ist dem kaum förderlich; denn überzogene Lohnsteigerungen belasten zusätzlich die ohnehin schlechte Ertragslage der ostdeutschen Unternehmen, beeinträchtigen außerdem die Gewinnerwartungen und dämpfen aller Erfahrung nach die Investitionsneigung. Im Schnitt des vergangenen Jahres beliefen sich in Ostdeutschland die Bruttolöhne und -gehälter je Beschäftigten auf rund 46% des westdeutschen Niveaus (gegenüber erst 36½%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1990). Dabei dürfte aufgrund der großen Zahl von Kurzarbeitern die Relation der Effektivverdienste eher unterzeichnet sein; das Verhältnis der Tariflöhne, welches im Mittel bei etwa 60% lag, überzeichnet hingegen tendenziell die Annäherung an das westdeutsche Niveau, da bei den tariflichen Nebenvereinbarungen – wie zum Beispiel dem Urlaubsgeld – die Anpassung im allgemeinen noch nicht so weit fortgeschritten ist.

Der starke Lohnkostenschub hat auch ein gut Teil zum kräftigen Anstieg der Verbraucherpreise, insbesondere der Preise für Dienstleistungen, beigetragen. Zur Jahresmitte 1991 war die Lebenshaltung in Ostdeutschland um knapp 14%, am Jahresende um 21½% teurer als ein Jahr zuvor. Überwiegend stehen hinter dieser Preisentwicklung freilich nicht inflationäre Vorgänge, sondern Anpassungen der Preisrelationen an die tatsächlichen Knappheitsverhältnisse und damit an marktwirtschaftliche Bedingungen. So erklärt sich der Unterschied der Preissteigerungsrate zur Jahresmitte und am Jahresende in der Hauptsache damit, daß zum 1. Oktober 1991 die Mieten in einem ersten Schritt von ihrem sehr niedrigen Stand aus kräftig angehoben wurden, und zwar mit dem Ziel, sie auf diese Weise den Kosten der Wohnungsnutzung anzunäh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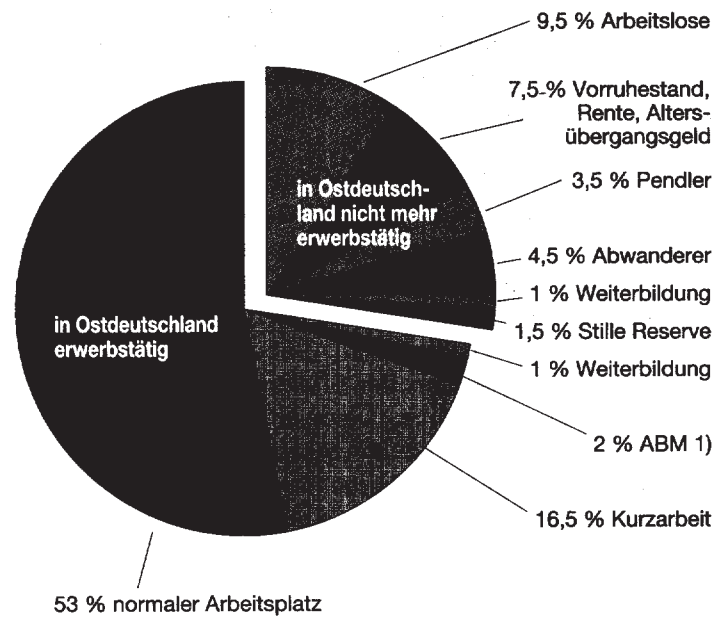
Hohe Teuerungsrate

Der Übergang von der sozialistischen Kommandowirtschaft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erfordert auch eine grundlegende Veränderung der Beschäftigungsstruktur. Der staatliche Apparat und weite Teile der ostdeutschen Wirtschaft waren im alten System aus vielfältigen Gründen personell überbesetzt; andere (zum Teil an der Entfaltung gehinderte) Bereiche waren hingegen unterbesetzt. Die notwendigen Wanderungsbewegungen, die nicht nur zwischen den Wirtschaftssektoren, sondern auch innerhalb eines Sektors stattfinden, vollziehen sich nicht zeitgleich. Vielmehr werden zunächst Arbeitskräfte freigesetzt – ein Prozeß, der durch den geschilderten Niedergang etwa der Industrieproduktion zudem beträchtlich verstärkt wurde. Zwar sind auch bereits in beachtlichem Umfang neue Arbeitsplätze entstanden. Bisher reichte dies aber nicht aus, den Beschäftigtenstand insgesamt zu halten. Nach Angab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waren im Jahresdurchschnitt 1991 in den neuen Bundesländern rund 7½ Millionen Personen erwerbstätig; im Jahre 1989 waren es noch nahezu 10 Millionen gewesen, also etwa ein Drittel mehr. Berücksichtigt man, daß die genannten Angaben die weiterhin im Osten der Bundesrepublik wohnenden, abe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arbeitenden Personen enthalten – im vierten Quartal 1991 nahezu ½ Million –, so ergibt sich von 1989 bis 1991 per saldo ein Rückgang der Beschäftigtenzahl um 2¾ Millionen. Darin sind rund ½ Million Erwerbspersonen enthalten, die die ehemalige DDR verlassen haben, um in Westdeutschland zu leben und zu

In großem Umfang
Freisetzung von
Arbeitskräften

Veränderung der Erwerbstätigkeit in Ostdeutschland von 1989 bis 1991

Anteile in %



1)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BBk

arbeiten. Gleichzeitig erhöhte sich der Bestand an Arbeitslosen auf nahezu 1 Million im Jahresdurchschnitt 1991; dies entspricht – den Berechnung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folge – einer Arbeitslosenquote von rund einem Zehntel. Etwa 1 Million Personen, darunter besonders Frauen, deren Erwerbsbeteiligung in der früheren DDR ungewöhnlich hoch gewesen war, schieden – größtenteils mit staatlicher Unterstützung – aus dem Erwerbsleben aus. So dürfte bis zu einer $\frac{3}{4}$ Million älterer Arbeitnehmer von den verschiedenen Angeboten einer vorzeitigen Verrentung (Vorruhestand, Altersübergangsgeld) Gebrauch gemacht haben oder wegen Erreichens der Altersgrenze in den Ruhestand gegangen sein. Manche Arbeitnehmer haben die Suche nach einem Arbeitsplatz wohl nur vorübergehend aufgegeben und nutzen die zahlreichen Möglichkeiten zur Umschulung und Weiterbildung.

Starker Einsatz
arbeitsmarktpolitischer
Maßnahmen

Bei weitem nicht alle der gegenwärtig noch vorhandenen Arbeitsplätze scheinen auf Dauer gesichert; nicht wenige werden wohl lediglich durch Subventionen erhalten. Dies gilt vermutlich für einen erheblichen Teil der Kurzarbeiterstellen. Zwar hat sich die Zahl der Kurzarbeiter zu Jahresbeginn auf gut 500 000 nach rund $1\frac{1}{2}$ Millionen im Mittel von 1991 verringert, nachdem nur für Ostdeutschland geltende Sonderregelungen (zum Beispiel Kurzarbeitergeld auch bei langanhaltendem Arbeitsausfall und „Warteschleifen“ im öffentlichen Dienst) ausgelaufen sind. Gegenläufig dazu ist die Arbeitslosigkeit kräftig auf 1,3 Millionen Personen gestiegen. Als Hoffnungsschimmer für den Arbeitsmarkt ist jedoch zu werten, daß die Zunahme der Zahl der Arbeitslosen am Jahresanfang 1992 hinter dem Rückgang der Kurzarbeiterzahl zurückblieb. Gleichwohl bleibt die Beschäftigungslage zunächst schwierig, so daß weiterhin in großem Umfang auf arbeitsmarktpolitische Maßnahmen zurückgegriffen wird.

Manche der verbliebenen Kurzarbeiterstellen dürften der ursprünglichen Zielsetzung kaum genügen, lediglich einen vorübergehenden Arbeitsausfall zu überbrücken. Neben dem Kurzarbeitergeld finanziert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ferner umfangreiche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An solchen Programmen nahmen zur Jahreswende 1991/92 rund 400 000 Personen teil, zu Jahresanfang waren es erst 35 000 gewesen. Träger solcher Maßnahmen sind vielfach eigens gegründete Gesellschaften zur Arbeitsförderung, Beschäftigung und Strukturentwicklung. Bemerkenswert stark hat während des letzten Jahres auch die Beteiligung an (ebenfalls von der Bundesanstalt finanzierten) Maßnahmen zur Fortbildung, Umschulung und betrieblichen Einarbeitung zugenommen; zur Jahreswende betrug die Teilnehmerzahl 440 000.

Die im Laufe vorigen Jahres in Gang gekommene Entwicklung ist ein erster Schritt in Richtung auf eine Angleichung der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Auslöser dafür waren hauptsächlich die umfangreichen Hilfen aus den westdeutschen öffentlichen Haushalten. Nach diesem ermutigenden Anfang muß es in einem zweiten Schritt darum gehen, daß die zuvor beschriebene Lücke zwischen Nachfrage und Einkommen einerseits und Produktion andererseits durch interne Antriebskräfte geschlossen wird. Dem ist eine möglichst rasche Anpassung der Löhne und Gehälter in Ostdeutschland an westdeutsche Verhältnisse kaum zuträglich, weil auf diese Weise verhindert wird, daß mehr Produktion rentabel wird oder bleibt, damit neue Arbeitsplätze entstehen oder alte erhalten werden. Angesichts der Ankopplung der ostdeutschen Löhne und Gehälter an das westdeutsche Niveau kommt in diesem Punkte auch den Tarifpartner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zusätzliche Verantwortung zu. Auf Dauer wäre der Versuch, die Marktkräfte durch staatliche Eingriffe zu überspielen, zum Scheitern verurteilt. Dies gilt für die Aufrechterhaltung nicht wettbewerbsfähiger Strukturen mit staatlichen Mitteln, wie sie etwa ein allein aus beschäftigungspolitischen Gründen unternommener Versuch einer Erhaltung an sich nicht mehr lebensfähiger Betriebe durch die Treuhandanstalt bedeuten würde; ähnlich wäre auch eine von Staats wegen betriebene „Industriepolitik“ oder eine Ausweitung der sozialen Ausgleichsmaßnahmen (beispielsweise zur Arbeitsbeschaffung) zu beurteilen. Zum einen könnte sich die notwendige wirtschaftliche Umstrukturierung verlangsamen, was das Risiko erhöhen würde, daß Ostdeutschland auch auf Dauer ein strukturschwaches Gebiet bleibt. Zum anderen wären anhaltende Staatsinterventionen mit einer großen Belast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 verbunden, bei denen in Anbetracht einer Kumulierung der Ansprüche (neben den Transferzahlungen für Ostdeutschland unter anderem Hilfen für Mittel- und Osteuropa und zusätzliche Anforderung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mehr und mehr die Gefahr einer Überforderung entsteht.

Gefahren für den
Wachstumsprozeß
in Ostdeutschland

2. Starke Anspannung der öffentlichen Finanzen

Die Entwicklung der öffentlichen Finanzen im Jahre 1991 wurde vor allem durch den hohen Bedarf an finanziellen Transfers von West nach Ost im Gefolge der deutschen Vereinigung geprägt. Da die Verfassung der Wirtschaft im Beitrittsgebiet sich als weitaus schlechter erwies als zunächst angenommen, wurden Anfang März umfangreiche zusätzliche Hilfen für den Umstrukturierungs- und Aufbauprozeß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schlossen. Nimmt man die Haushalte der Gebietskörperschaften und Sozialversicherungen zusammen und schließt auch die im Rahmen spezieller Förderprogramme von öffentlichen Kreditinstituten gewährten, mit Zinszuschüssen des Bundes verbilligten Darlehen ein,¹⁾ dürften die Transfers von West nach Ost 1991 eine Größenordnung von 140 Mrd DM erreicht haben. Wenn auch von der transferegestützten Nachfrage aus Ostdeutschland expansive Wirkungen auf die Wirtschaft und

Hohe Anforderungen
an Finanzpolitik durch
deutsche Vereinigung

¹ Das Darlehensvolumen ist freilich nicht mit dem Subventionswert der gewährten Zinsvorteile gleichzusetzen; dieser ist deutlich geringer.

damit die Steuereinnahmen im alten Bundesgebiet ausgingen, mußten sich die öffentlichen Haushalte doch auf große Mehrbelastungen einstellen, zumal nicht vorhergesehene Ausgaben durch den deutschen Beitrag zu den Kosten des Golfkriegs hinzukamen.

Maßnahmen zur Begrenzung des Staatsdefizits	Um die Ausweitung des Staatsdefizits zu begrenzen, wurden vor allem Sozialbeiträge heraufgesetzt sowie zur Jahresmitte indirekte Steuern erhöht und ein auf ein Jahr befristeter Solidaritätszuschlag zur Einkommen- und Körperschaftsteuer eingeführt. Das Mehraufkommen aus diesen Maßnahmen belief sich im vergangenen Jahr auf annähernd 30 Mrd DM. Durch die Abgabenerhöhungen wurden zugleich die expansiven Impulse der Finanzpolitik eingeschränkt. Dies trug zur Beruhigung der zunächst noch auf sehr hohen Touren laufenden Konjunktur in Westdeutschland bei. Allerdings blieb die Erhöhung der Abgaben nicht ohne ungünstige Folgen für die Preisentwicklung, und zwar nicht nur wegen der mit der Anhebung indirekter Steuern in der Regel vorgenommenen Preisaufschläge, sondern auch weil die zusätzliche Abgabenbelastung das Ergebnis der Lohnrunde (und damit den Kostenauftrieb) offenbar mitbeeinflusste. Die Kürzung von Ausgaben und die Verringerung steuerlicher Subventionen hielten sich vorerst in Grenzen. Die im März 1991 beschlossenen Einsparungen betrafen vor allem die Verteidigung und den stufenweisen Abbau der Berlin- und Zonenrandförderung.
Ausweitung des Defizits 1991 nicht so stark wie erwartet	Im Frühjahr war aufgrund der Haushaltsplanungen damit gerechnet worden, daß das Defizit der Gebietskörperschaften 1991 etwa 160 Mrd DM erreichen würde und – die Überschüsse der Sozialversicherungen gegengerechnet – beim Staat insgesamt etwa 150 Mrd DM. Im Endergebnis war die Deckungslücke aber erheblich geringer. So belief sich das Defizit (in haushaltsmäßiger Abgrenzung) im vergangenen Jahr auf etwa 120 Mrd DM bei den Gebietskörperschaften und 105 Mrd DM bis 110 Mrd DM beim Gesamtstaat (nach rund 90 Mrd DM bzw. etwa 75 Mrd DM im Jahre 1990). Zum einen übertraf das Steueraufkommen den im Frühjahr geschätzten Umfang um 10 Mrd DM, worin sich vor allem der stärkere Anstieg der Löhne auswirkte. Zum anderen blieben die Ausgaben sowohl des Bundes als auch der ostdeutschen Gebietskörperschaften beträchtlich hinter den Haushaltsansätzen zurück. Beim Bund betraf dies eine Vielzahl von Positionen. Die Minderausgaben in Ostdeutschland sind vor allem damit zu erklären, daß für öffentliche Investitionen dort weit weniger Mittel ausgegeben wurden als veranschlagt. Die ostdeutschen Gebietskörperschaften mußten ihre Investitionen von Grund auf neu planen. Der hierfür erforderliche Verwaltungsapparat mußte erst aufgebaut werden, es fehlte an Flächennutzungs- und Bebauungsplänen, und auch das vielfach noch ungeklärte Verfügungsrecht über Grundstücke bildete ein Hemmnis. Im Jahresverlauf kam die öffentliche Investitionstätigkeit im Osten aber zunehmend in Gang, wie die Auftragseingänge beim Baugewerbe zeigen. In den Ausgaben schlägt sich dies freilich erst mit zeitlichem Abstand nieder. Die 1991 entstandenen Minderausgaben sind insoweit also Folge von Übergangsproblemen und signalisieren nicht einen auf Dauer geringeren Finanzbedarf, zumal zahlreiche heimische und internationale Risiken bisher in den Haushaltsplanungen noch nicht berücksichtigt wurden.
Haushaltsentwicklung auf den einzelnen Ebenen	Die Ausweitung der Deckungslücke bei den Gebietskörperschaften im Jahre 1991 ging nur zum kleineren Teil auf den Bund zurück. Im Endergebnis war sein Defizit 1991 mit 52 Mrd DM ¹⁾ nur um 7 Mrd DM höher als im Jahre 1990, in dem der Bundeshaushalt durch die deutsche Vereinigung freilich schon sehr stark belastet worden war. Die zusätzlichen Ausgaben des Bundes für Ostdeutschland und für die Kostenbeteiligung am Golfkrieg wurden zum Teil durch die

¹ Nach Einrechnung des überplanmäßigen Bundesbankgewinns von 1,3 Mrd DM, der haushaltsmäßig unmittelbar zur Tilgung fälliger Schulden verwendet wird.

Finanzielle Entwickl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						
Position	1989	1990 ts) altes Bundes- gebiet	1990 1) ts) Ost- deutsch- land	1991 ts) Gesamt- Deutsch- land	1989	1990 altes Bundes- gebiet ts)
	Mrd DM				Veränderung gegen Vorjahr in %	
Gebietskörperschaften						
<i>Ausgaben</i>						
Personalausgaben	222,8	235	.	288,5	+ 2,9	+ 5,5
Laufender Sachaufwand	110,5	119,5	.	141,5	+ 5,3	+ 8
Transferausgaben 2)	202,6	214,5	.	293,5	+ 5,2	+ 6
Zinsausgaben	61,2	65	.	76,5	+ 1,2	+ 6
Sachinvestitionen	62,2	67	.	86,5	+ 6,9	+ 7,5
Finanzierungshilfen 3)	41,1	47	.	66,5	+ 1,8	+ 13
Insgesamt 4)	700,8	748	72	957	+ 4,1	+ 6,5
darunter:						
Bund	292,9	6) 311,5	72	405,5	+ 5,3	+ 6,5
Westdeutsche Länder	282,7	300	.	7) 322,5	+ 4,7	+ 6
Ostdeutsche Länder	.	.	.	75,5	.	.
Westdeutsche Gemeinden	194,3	209,5	.	227,5	+ 5,4	+ 7,5
Ostdeutsche Gemeinden	.	.	.	46	.	.
EG 5)	24,4	22,5	.	33	- 3,7	- 7,5
<i>Einnahmen</i>						
Steuereinnahmen	535,5	549,5	17	661,5	+ 9,7	+ 2,5
Sonstige Einnahmen	146,0	155	11	182,5	+ 9,8	+ 6
Insgesamt 4)	678,6	701,5	28	837	+ 9,4	+ 3,5
darunter:						
Bund	8) 277,9	8) 290,5	48	8) 353,5	+ 14,7	+ 4,5
Westdeutsche Länder	275,1	280,5	.	7) 306,5	+ 8,4	+ 2
Ostdeutsche Länder	.	.	.	66,5	.	.
Westdeutsche Gemeinden	196,0	205,5	.	221,5	+ 5,9	+ 4,5
Ostdeutsche Gemeinden	.	.	.	45	.	.
EG	24,4	22,5	.	33	- 3,7	- 7,5
Überschuß (+) bzw. Defizit (-)	- 22,2	- 46	- 44	- 120	.	.
darunter:						
Bund	8) - 15,0	8) - 21	- 24	8) - 52	.	.
Westdeutsche Länder	- 7,6	- 19,5	.	7) - 16	.	.
Ostdeutsche Länder	.	.	.	- 9	.	.
Westdeutsche Gemeinden	+ 1,7	- 4	.	- 6	.	.
Ostdeutsche Gemeinden	.	.	.	- 1	.	.
Fonds „Deutsche Einheit“	.	.	- 20	- 30,5	.	.
Kreditabwicklungsfonds	.	.	.	+ 0,5	.	.
ERP-Sondervermögen	- 1,1	- 2	.	- 6,5	.	.
Sozialversicherungen						
Ausgaben	400,5	425	.	544	+ 1,4	+ 6
Einnahmen	413,7	441	.	557	+ 5,2	+ 6,5
Überschuß (+) bzw. Defizit (-)	+ 13,2	+ 16	.	+ 13	.	.
Öffentliche Haushalte insgesamt						
Ausgaben	1051,8	1121,5	.	1431	+ 2,9	+ 6,5
Einnahmen	1042,8	1091	.	1323	+ 7,9	+ 4,5
Defizit (-)	- 9,0	- 30,5	.	- 108	.	.

* Einschl. kaufmännisch buchender Krankenhäuser und anderer Sonderrechnungen. Die Einnahmen und Ausgaben werden hier entsprechend der haushaltsmäßigen Zuordnung dem Zeitraum zugerechnet, für den sie bestimmt sind. — 1 Abschnitt B des Bundeshaushaltes und Fonds „Deutsche Einheit“; nur 2. Halbjahr 1990. — 2 Hauptsächlich Sozialausgaben und laufende Zuweisungen an den Unternehmenssektor. — 3 Ausgaben für Investitionszuschüsse und Darlehen an Dritte sowie Beteiligungserwerb. — 4 In dieser Summe sind — anders als in den folgenden Angaben für Bund, Länder und Gemeinden — die Zuweisungen zwischen

den einzelnen Haushaltsebenen nicht enthalten (abgesehen von der Differenz im Verrechnungsverkehr, die infolge der Einbeziehung der ostdeutschen Gebietskörperschaften besonders hoch ausfällt). — 5 Aus ihren Einnahmen in der Bundesrepublik bestrittene Ausgaben der EG. — 6 Einschl. Zuweisungen des Bundes an den Fonds „Deutsche Einheit“ und die Sozialversicherungen in Ostdeutschland. — 7 Einschl. Berlin. — 8 Die Gewinnabführung der Bundesbank ist hier in voller Höhe als Einnahme des Bundes enthalten. — ts Teilweise geschätzt. Differenzen in den Summen durch Runden der Zahlen.

BBK

Mehreinnahmen aus den Steuererhöhungen gedeckt. Die westdeutschen Länder (einschl. Berlin) verzeichneten ein Defizit von ungefähr 16 Mrd DM, das damit etwas geringer ausfiel als 1990. Zwar haben ihre Ausgaben um etwa 7% zugenommen und damit stärker als geplant; hier schlug nicht zuletzt der hohe Tarifabschluß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zu Buche. Jedoch wuchsen ihre Einnahmen noch stärker, obwohl sie Einbußen dadurch hinzunehmen hatten, daß die neuen Bundesländer in die Verteilung des Länderanteils am Umsatzsteueraufkommen nach der Einwohnerzahl einbezogen wurden. Bei den Gemeinden im alten Bundesgebiet erhöhten sich die Einnahmen in ähnlichem Maße wie auf der Länderebene; doch wuchsen die Ausgaben – nicht zuletzt wegen der stärkeren Inanspruchnahme von Sozialhilfe und unter dem Einfluß des Baupreisauftriebs – sogar um fast 9%. Somit weitete sich das kommunale Defizit von 4 Mrd DM (1990) auf ungefähr 6 Mrd DM aus. Das Defizit der neuen Bundesländer erreichte mit schätzungsweise 9 Mrd DM aus den erwähnten Gründen nur etwa die Hälfte des veranschlagten Umfangs, und bei den ostdeutschen Gemeinden dürfte vorerst allenfalls ein geringes Defizit entstanden sein. Mit ins Bild zu nehmen ist hier freilich der Fonds „Deutsche Einheit“; über ihn wurden 1991 Kredite in Höhe von 31 Mrd DM aufgenommen (nach 20 Mrd DM im Jahre 1990). Weitere Kosten des Umstellungsprozesses im Beitrittsgebiet treten überdies bei der Treuhandanstalt zutage, deren Defizit sich 1991 auf 20 Mrd DM belief. Die Treuhandanstalt wird zwar nach der offiziellen Abgrenzung nicht den öffentlichen Haushalten, sondern dem Unternehmenssektor zugerechnet; sie nimmt faktisch aber bedeutende „öffentliche“ Aufgaben im Umstrukturierungsprozeß der ostdeutschen Wirtschaft wahr, und die auflaufenden Schulden werden später vom Staat zu übernehmen und zu bedienen sein.

Beanspruchung der Kreditmärkte

Die Finanzierung des Defizits speziell des Bundes an den Kreditmärkten wurde 1991 dadurch erleichtert, daß er zunächst auf umfangreiche Kassenreserven aus Kreditaufnahmen „auf Vorrat“ und auf Rückflüsse 1990 nicht verbrauchter Mittel zurückgreifen konnte. Alles in allem blieb die Nettokreditaufnahme der Gebietskörperschaften 1991 mit 102 Mrd DM unter dem Haushaltsdefizit, und sie war – anders als das Defizit – etwas geringer als 1990 (112 Mrd DM). Die übrigen, nicht zum engeren Kreis der Gebietskörperschaften zählenden öffentlichen Kreditnehmer (Post, Bahn und Treuhandanstalt) hinzugerechnet, ist die Inanspruchnahme der Kreditmärkte durch die öffentliche Hand allerdings von 125 Mrd DM im Jahre 1990 auf 141 Mrd DM gestiegen. Darüber hinaus ist in Rechnung zu stellen, daß durch die Zinssubventionierung von Bankkrediten für Unternehmensinvestitionen, für Existenzgründungen und für die Wohnungsmodernisierung in Ostdeutschland sowie durch andere Fördermaßnahmen die Kreditaufnahme des privaten Sektors staatlicherseits beträchtlich stimuliert wurde.

Staatsfinanzen im Spiegel finanzpolitischer Kennzahlen

Die Anspannung der öffentlichen Finanzen im Zuge der deutschen Vereinigung zeigt sich deutlich beim Vergleich mit der Haushaltssituation im alten Bundesgebiet im Jahre 1989, die dank der über längere Zeit betriebenen Konsolidierungspolitik recht günstig gewesen war. Die sog. Staatsquote, die Relation zwischen den Staatsausgaben und dem Bruttosozialprodukt, lag 1991 in Gesamtdeutschland mit etwa 51% um rund 4 Prozentpunkte höher als zwei Jahre zuvor in Westdeutschland.¹⁾ Die Gesamteinnahmenquote blieb dagegen mit 47% verglichen mit 1989 nahezu unverändert. Die Belastung mit Sozialbeiträgen hat dabei zugenommen, während die volkswirtschaftliche Steuerquote leicht zurückgegangen ist (und zwar von knapp 24% im Jahre 1989 im alten Bundesgebiet auf 23½% in Gesamtdeutschland 1991). Für letzteres gab den Ausschlag, daß die Mitte 1991 vorgenommenen Steuererhöhungen in der

¹ Der Berechnung der Staatsquote wurden hier die haushaltsmäßigen Ausgaben zugrunde gelegt. Wird von den Ausgaben in der Abgrenzung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ausgegangen, ist die Staatsquote etwas niedriger.

Verschuldung der Gebietskörperschaften						
Mrd DM						
Position	1989	1990	1991 (ts)	1989	1990	1991 (ts)
	Stand am Jahresende			Veränderung gegen Vorjahr		
Schuldscheindarlehen	496,0	517,0	547,5	- 6,7	+ 21,0	+ 30,5
Wertpapiere	414,9	518,6	602,5	+ 32,9	+ 103,6	+ 84
Sonstige Schulden	17,9	17,9	19,5	- 0,3	+ 0,0	+ 1,5
Insgesamt	928,8	1053,5	1169,5	+ 25,8	1) + 124,7	1) + 116
darunter:						
Bund	490,5	542,2	586	+ 15,4	+ 51,6	2) + 44
Westdeutsche Länder	309,9	328,8	348,5	+ 7,3	+ 18,9	+ 19,5
Ostdeutsche Länder	.	.	3,5	.	.	+ 3,5
Westdeutsche Gemeinden	112,9	116,5	122	+ 1,6	+ 3,6	+ 5,5
Ostdeutsche Gemeinden	.	.	6	.	.	+ 6
Fonds „Deutsche Einheit“	.	19,8	50,5	.	+ 19,8	+ 30,5
Kreditabwicklungsfonds	.	27,6	27,5	.	+ 27,6	- 0
ERP-Sondervermögen	7,1	9,5	16,5	+ 1,1	+ 2,4	+ 7
Nachrichtlich:						
Treuhandanstalt	.	4,4	25	.	+ 4,4	+ 20,5
Deutsche Bundesbahn/ Reichsbahn	44,1	48,4	43	+ 1,4	+ 4,3	- 5,5
Deutsche Bundespost	66,2	71,0	81,5	+ 2,0	+ 4,8	+ 10,5

1 Die im Text auf S. 30 genannte Nettokreditaufnahme ist geringer als die Zunahme des Schuldenstandes, die auch die Übernahme von Altschulden einschließt. — 2 Einschl. von der Bundesbahn übernommener Anleihen in Höhe von 12,6 Mrd DM. — 3 Ohne Anleihen in Höhe von 12,6 Mrd DM, die der Bund übernommen hat. — ts Teilweise geschätzt. BBk

Steuerquote vorerst weniger zu Buche schlagen als die vor der deutschen Einigung beschlossenen, Anfang 1990 in Kraft getretenen Steuersenkungen. Im Jahre 1992 wird die Steuerquote voraussichtlich allerdings zunehmen. Die Defizitquote stieg von ½% des Sozialprodukts 1989 auf knapp 4% (also fast auf eine Höhe wie zu Beginn der achtziger Jahre).¹⁾ Die Staatsverschuldung erreichte Ende 1991 — mit 1 170 Mrd DM — rund 42% des Sozialprodukts.²⁾ Dabei stand die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aus der mit weiteren Verbindlichkeiten des Kreditabwicklungsfonds von 65 Mrd DM bis 70 Mrd DM gerechnet wird, noch aus; die Verschuldung der Treuhandanstalt ist hierin nicht enthalten.

Öffentliche Defizite in einem Umfang wie 1991 sind nicht über längere Zeit durchzuhalten. Dies gilt nicht zuletzt unter stabilitätspolitischen Gesichtspunkten, denn die Geldpolitik würde überlastet, wenn sie allein die Aufgabe bewältigen sollte, den gegenwärtig relativ starken Preisanstieg nachhaltig einzudämmen. Dazu bedarf es — neben einer maßvollen Lohnpolitik — einer Finanzpolitik, die nach der durch die deutsche Vereinigung entstandenen Ausnahmesituation wieder mit aller Entschiedenheit die Haushaltskonsolidierung ansteuert.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hat als Zielmarke genannt, daß das Haushaltsdefizit der Gebietskörperschaften bis 1995 auf 2½% des Bruttoinlandsprodukts verringert werden soll. Nach den Haushaltsplanungen soll die Rückführung des Defizits im Jahre 1992 beginnen. Mithelfen wird hierbei voraussichtlich ein recht starker Anstieg der Steuereinnahmen, der bei der letzten offiziellen Steuerschätzung im Herbst vergangenen Jahres mit 9% veranschlagt wurde. Zwar führt die Anhebung des Kinderfreibetrages zu Einnahmehausfällen, jedoch schlägt die Mitte 1991 erfolgte Erhöhung indirekter Steuern nun ein volles Jahr zu Buche, und im März 1992 ist noch die Tabaksteuer heraufgesetzt worden. Allerdings dürften auch die Ausgaben der Gebietskörperschaften den Planungen zufolge 1992 nochmals recht kräftig zunehmen, wenngleich im einzelnen mit erheblichen Unterschieden. Der Bund will den Anstieg seiner Ausgaben gegenüber dem Soll 1991 auf 3% beschrän-

Bei Gebietskörperschaften 1992 erster Schritt zur Rückführung des Defizits

1 Gemäß den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und bezogen auf das Bruttoinlandsprodukt, d. h. in der für die Konvergenzkriterien in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beschlossenen Abgrenzung, lag das Staatsdefizit 1991 bei 3,2% (vgl. auch S. 8).

2 Diese Angabe entspricht der Schuldenstandstatistik und weicht aus methodischen Gründen von dem in der Tabelle auf S. 8 genannten Wert ab.

ken (was durch den Wegfall der Leistungen für die Finanzierung des Golfkriegs erleichtert wird); im Vergleich zu dem niedrigeren Ist 1991 ergibt sich freilich eine höhere Steigerungsrate. Die westdeutschen Länder und Gemeinden planen ein Ausgabenwachstum von gut 4% bzw. rund 6%. Damit würde sich der Anstieg gegenüber 1991 merklich verlangsamen. Allerdings bestehen hier noch beträchtliche Unsicherheiten wegen des Tarifabschlusses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i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ihren Gemeinden ist nach Überwindung der erwähnten Anlaufprobleme und aufgrund der schrittweisen Annäherung der Tarifregelungen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an die westdeutschen Gegebenheiten dagegen ein sehr kräftiger Anstieg der Ausgaben zu erwarten, wenngleich durch den Abbau von Personal und von Verbrauchersubventionen Mittel eingespart werden können. Beträchtlich zunehmen werden außerdem die Zinsaufwendungen des Kreditabwicklungsfonds (die je zur Hälfte vom Bund und von der Treuhandanstalt zu erstatten sind), und auch die Darlehensvergabe durch das ERP-Sondervermögen soll sich erhöhen. Schließlich ist mit stark wachsenden Ausgaben im Rahmen der deutschen EG-Mitgliedschaft zu rechnen. Insgesamt dürfte, soweit sich das derzeit absehen läßt, der Fortschritt in der Konsolidierung der Haushalte der Gebietskörperschaften im Jahre 1992 nicht sehr groß ausfallen. Freilich ist die Einschätzung der Haushaltsentwicklung noch mit vielerlei Unsicherheiten behaftet.

Bei Sozialversicherungen nach Überschüssen nunmehr Defizite

Das gesamte Staatsdefizit wird sich im Jahre 1992 – auch wenn man das wachsende Defizit der Treuhandanstalt nicht einrechnet – gegenüber 1991 wahrscheinlich sogar nochmals ausweiten, da sich im Sozialversicherungsbereich ein starker Umschwung in der Finanzlage abzeichnet. Hier dürfte an die Stelle eines Überschusses, der 1991 noch etwa 13 Mrd DM ausmachte, 1992 ein Defizit von ungefähr 15 Mrd DM treten. Wichtigster Grund dafür ist die Verschlechterung in den Finanzen der Rentenversicherung, die vor allem durch die Übertragung des westdeutschen Rentenrechts auf Ostdeutschland zum Jahresbeginn 1992 verursacht wird. Bei der Rentenversicherung treten somit die finanziellen Konsequenzen der deutschen Vereinigung erst 1992 voll zutage. Zunehmende Belastungen von seiten Ostdeutschlands entstehen auch für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Schließlich könnte sich das Defizit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im alten Bundesgebiet noch ausweiten, wenn die starke Kostenexpansion im Gesundheitswesen anhält. Das Defizit der Rentenversicherung kann zwar zunächst noch aus den Rücklagen finanziert werden, voraussichtlich spätestens 1994 muß dann jedoch der Beitragssatz heraufgesetzt werden. Auch in der Krankenversicherung werden nach dem Abbau von Reserven Beitragserhöhungen erforderlich; bereits Anfang 1992 hat ein Teil der Krankenkassen diesen Weg beschritten. Inwieweit es möglich sein wird, höhere Renten- und Krankenversicherungsbeiträge mittelfristig durch eine Senkung des Beitragssatzes zur Bundesanstalt für Arbeit – im Gefolge einer Besserung der Arbeitsmarktlage in Ostdeutschland – auszugleichen, ist noch schwer abzuschätzen. In Hinblick auf die Gesamtabgabenlast wird die Steuerpolitik jedenfalls die Entwicklung der Sozialbeiträge nicht außer acht lassen können.

Weitere Konsolidierungsanstrengungen erforderlich

Die Aussichten für die öffentlichen Finanzen im Jahre 1992 machen deutlich, welch großer Anstrengungen es noch zu der mittelfristig angestrebten Konsolidierung bedarf. Dabei ist auch in Rechnung zu stellen, daß vielfältige Haushaltsrisiken bestehen, zum Beispiel im Hinblick auf Entschädigungsleistungen in Ostdeutschland, die Beseitigung dortiger Umweltschäden, die Bürgschaften für Exportkredite, Hilfen an Osteuropa und steigende Finanzansprüche der EG im Vorfeld der Europäischen Währungsunion. Die Bewältigung der gesamtstaatlichen Konsolidierungsaufgabe setzt strenge Ausgabendisziplin voraus. So hat der Finanzplanungsrat, in dem alle Gebietskörperschaften vertreten sind, im Dezember 1991 festgestellt, daß der Ausgabenzuwachs bei Bund und alten Ländern sowie deren Gemeinden wieder auf eine Größenord-

nung von 3% beschränkt werden muß. In den Haushalten der neuen Länder gilt es, den Investitionen soweit wie möglich Vorrang vor konsumtiven Aufwendungen zu geben. Eine nicht unbeträchtliche Gefahr für den Konsolidierungskurs im ganzen entstünde, wenn er durch weitere Beschlüsse über ausgaben-trächtige Maßnahmen in einzelnen Politikbereichen aufgeweicht würde; dies gilt nicht zuletzt auch für die Sozialpolitik. Soll der Aufbauprozess in Ostdeutschland möglichst rasch vorangebracht werden, ohne Staatsfinanzen und Gesamtwirtschaft zu überfordern, so müssen manche anderen Vorhaben, insbesondere Leistungsausweitungen, vorerst zurückstehen.

Mitte Februar dieses Jahres wurden mit dem Kompromiß über das Steueränderungsgesetz 1992 sowie das Gesetz zur Aufhebung des Strukturhilfegesetzes und zur Aufstockung des Fonds „Deutsche Einheit“ – über die rückwirkend zum Jahresbeginn 1992 vorgenommenen Verbesserungen beim Familienlastenausgleich hinaus – wichtige Entscheidungen für die nächsten Jahre getroffen. Dazu gehört vor allem die Anhebung des Regelsatzes der Mehrwertsteuer um 1 Prozentpunkt zum Jahresbeginn 1993; das zusätzliche Aufkommen wird in den kommenden beiden Jahren zur Aufstockung des Fonds „Deutsche Einheit“ verwendet. Insgesamt wird durch die beschlossenen Regelungen die Finanzausstattung der ostdeutschen Länder und Gemeinden wesentlich verbessert, um diese in die Lage zu versetzen, ihren dringlichen Aufgaben ohne übermäßige Kreditaufnahme nachzukommen. Der Kompromiß bringt, verglichen mit den Beschlüssen des Bundestages vom November 1991, eine erhebliche zusätzliche Belastung des Bundeshaushalts mit sich; soweit der Bund nicht noch „Etatreserven“ einsetzen kann, werden zusätzliche Einsparungen erforderlich, um die angestrebte Linie der Defizitreduzierung einzuhalten. Im Hinblick auf das Ziel der Geldwertstabilisierung ist es im übrigen unbedingt geboten, daß die Erhöhung der Mehrwertsteuer zugunsten Ostdeutschlands nicht zu entsprechenden Lohnsteigerungen führt. Sie sollte verteilungspolitisch akzeptiert werden. Über die primären Preiseffekte hinaus darf kein kumulativer Prozeß von Preis- und Lohnsteigerungen in Gang kommen.

Mehrwertsteuer-
erhöhung und Auf-
stockung des Fonds
„Deutsche Einheit“

3. Außenwirtschaftliche Anpassung im Zuge der deutschen Vereinig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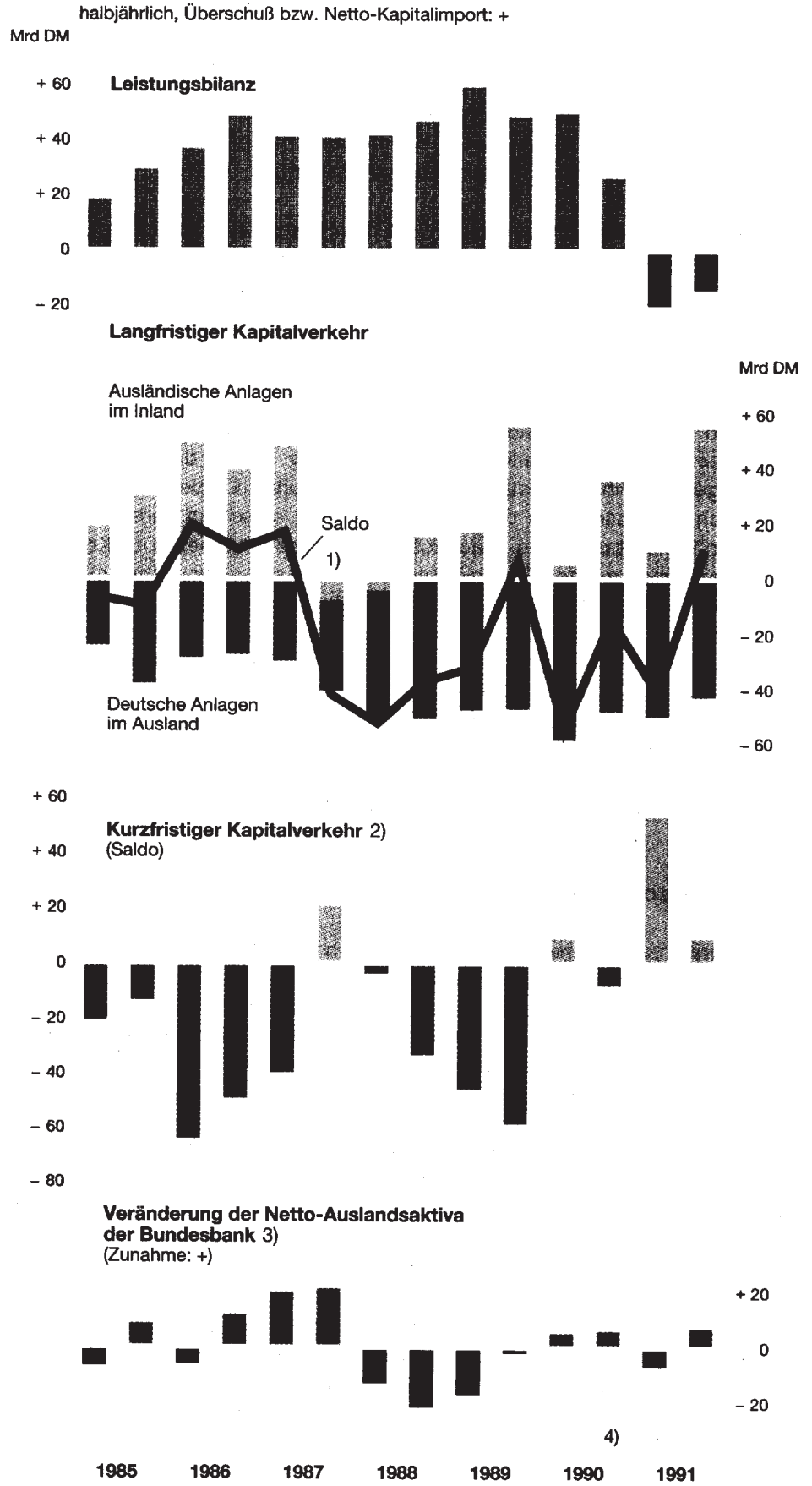
Die außenwirtschaftliche Lage hat sich nach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einschneidend verändert. Nachdem die Überschüsse im grenzüberschreitenden Leistungsverkehr in den Jahren vor 1990 auf immer neue Spitzenwerte gestiegen waren und in den Partnerländern vielfach zu Kritik Anlaß gegeben hatten, sind sie nach dem Übergang zur Währungsunion mit der ehemaligen DDR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1990 bereits erheblich abgebaut worden. Im vergangenen Jahr hat sich diese Entwicklung verstärkt fortgesetzt. Im Ergebnis schloß die deutsche Leistungsbilanz 1991 mit einem bisher in dieser Höhe nicht verzeichneten Defizit von 33 Mrd DM ab, während 1990 noch ein Überschuß von 76 Mrd DM angefallen war. Der Umschwung zwischen den beiden Jahren machte somit rund 110 Mrd DM oder etwa 4% des gesamtdeutschen Sozialprodukts aus. Über den damit verbundenen Importanstieg konnte der dringende Bedarf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trotz der bereits hoch ausgelasteten westdeutschen Produktionskapazitäten weitgehend spannungsfrei gedeckt werden. Gleichzeitig bot die hohe Nachfrage aus Deutschland auch der Wirtschaftsentwicklung in den Partnerländern eine willkommene Stütze und trug zu einem ausgeglicheneren Leistungsbilanzgefüge in der Weltwirtschaft bei.

Drastischer
Umschwung in der
Leistungsbilanz

Der beispiellose Umschwung in der Leistungsbilanz ist vor allem das Ergebnis der verstärkten Einfuhr-tätigkeit. Im Jahre 1991 übertrafen die gesamtdeutschen Importe ihr Vorjahrsniveau (das für den erweiterten Gebietsstand behelfsweise ermittelt wurde) dem Wert nach um 12%, wobei der Schwerpunkt des

Lebhafte Einfuhr-
tätigkeit . . .

Struktur der Zahlungsbilanz



1) Auflösung von ausländischen Anlagen im Inland.- 2) Einschließlich Restposten der Zahlungsbilanz.- 3) Soweit transaktionsbedingt.- 4) Ab Juli 1990 einschl. Transaktionen des Gebiets der ehemaligen DDR mit dem Ausland.

Importsogs im ersten Halbjahr lag, als die Käufe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besonders stark expandierten. Vor allem die westeuropäischen Industrieländer haben aufgrund ihrer konjunkturell unterausgelasteten Kapazitäten einen großen Teil des Nachfragesogs auf sich ziehen können und auf diese Weise 1991 ein um schätzungsweise $\frac{1}{2}$ Prozentpunkt höheres Wirtschaftswachstum erzielt. Daneben kam die verstärkte Importnachfrage aus Deutschland aber auch den außereuropäischen Handelspartnern zugute. Zum Teil geschah dies freilich auf indirektem Wege, indem vor allem die übrigen EG-Länder ihrerseits mehr Importgüter insbesondere aus den Vereinigten Staaten und Japan einführten.

Auch auf der Exportseite hat der deutsche Einigungsprozeß deutliche Spuren hinterlassen. Gegenläufig zur lebhaften Entwicklung der Importtätigkeit haben sich die Ausfuhren abgeschwächt, obwohl sich die preisliche Wettbewerbsfähigkeit der deutschen Wirtschaft vor allem in der ersten Jahreshälfte eher noch etwas verbesserte. Im Ergebnis sind die gesamtdeutschen Exporte 1991 gegenüber dem Vorjahr dem Wert nach um 2% zurückgegangen. Bei hoch ausgelasteten Kapazitäten haben die westdeutschen Unternehmen insbesondere im ersten Halbjahr ihre Produkte zunehmend im Osten Deutschlands angeboten und dort zur Deckung der starken Nachfrageexpansion beigetragen. Die gleichzeitige konjunkturelle Abkühlung auf wichtigen Exportmärkten hat diese „Umleitung“ des westdeutschen Güterangebots sicher begünstigt. Unabhängig davon ist die schwache Ausfuhrentwicklung Anfang vergangenen Jahres auch darauf zurückzuführen, daß die Betrieb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ach dem Zusammenbruch des Tausch- und Verrechnungssystems des Rates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RGW) ihre traditionellen Abnehmer in Osteuropa größtenteils verloren.

Insgesamt zeigt sich also deutlich, daß die drastische Wende in den grenzüberschreitenden Handelsströmen in erster Linie Reflex der besonderen Situation der deutschen Wirtschaft nach der Vereinigung war, durch die ihre Leistungsfähigkeit in extremer Weise beansprucht wurde. Vor allem im ersten Halbjahr 1991 hat der Außenhandel eine ausgleichende „Ventilfunktion“ erfüllt. In der zweiten Hälfte des vergangenen Jahres, als der spontane Nachfrageschub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etwas abflaute, begannen sich die Marktverhältnisse im Inland wieder zu normalisieren. Parallel dazu hat die Importnachfrage kaum mehr zugenommen, und umgekehrt zeigte die Exporttätigkeit wieder eine gewisse Belebung. Offenbar haben die Unternehmen mit der nachlassenden Auftragsflut aus dem Inland ihre Verkaufsanstrengungen auf ihren angestammten Märkten im Ausland wieder verstärkt. Dabei mag ihnen geholfen haben, daß sie insbesondere gegenüber ihren wichtigsten Handelspartnern ihre preisliche Wettbewerbsfähigkeit weitgehend behaupten konnten. Dennoch ist es bis zum Ende des vergangenen Jahres noch nicht zu einer nachhaltigen und durchgreifenden Belebung der deutschen Exporte gekommen. Die insgesamt eher enttäuschende Konjunktorentwicklung in den meisten Partnerländern ist wohl der wichtigste Grund dafür.

Zu dem gravierenden Umschwung der deutschen Leistungsbilanz haben neben dem Außenhandel auch höhere Defizite bei den übrigen Leistungstransaktionen beigetragen. In besonderer Weise gilt dies für die Übertragungen an das Ausland, die 1991 mit über 59 Mrd DM (gegenüber 37 Mrd DM im Vorjahr) ein außergewöhnlich hohes Defizit aufwiesen. In der ersten Jahreshälfte 1991 schlug vor allem die Übernahme eines Kostenanteils in Höhe von etwa 12 Mrd DM zur Finanzierung des Golfkriegs zu Buche. Hinzu kam im Verlauf des Jahres ein kräftiger Anstieg der Netto-Beiträge an den EG-Haushalt; mit 19 Mrd DM waren diese Zahlungen 1991 um $7\frac{1}{2}$ Mrd DM höher als ein Jahr zuvor. Darüber hinaus fiel auch ins Gewicht, daß der Bund entsprechend dem sog. Überleitungsvertrag im Zusammenhang mit dem Abzug der sowjetischen Truppen aus dem Osten Deutschlands rund $2\frac{1}{2}$ Mrd DM zu leisten hatte. Die

... und schwache Exporte

Stabilisierung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Höhere Defizite im Dienstleistungsverkehr und bei den Übertragungen

Hauptposten der Zahlungsbilanz^{o)}

Mrd DM

Position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o)}	1991
A. Leistungsbilanz								
1. Außenhandel								
Ausfuhr (fob) ¹⁾	488,2	537,2	526,4	527,4	567,7	641,0	662,0	665,8
Einfuhr (fob) ¹⁾	421,4	451,1	403,0	399,5	428,4	493,4	543,5	627,3
Saldo	+ 66,8	+ 86,0	+ 123,4	+ 127,9	+ 139,2	+ 147,6	+ 118,6	+ 38,5
2. Ergänzungen zum Warenverkehr und Transithandel ²⁾	- 1,1	- 1,3	- 1,5	- 1,1	+ 1,1	- 1,3	- 0,5	+ 1,8
Saldo des gesamten Warenhandels	+ 65,8	+ 84,7	+ 121,9	+ 126,8	+ 140,3	+ 146,4	+ 118,1	+ 40,3
3. Dienstleistungen								
Einnahmen	133,5	142,5	142,0	145,1	151,8	186,7	210,8	231,2
Ausgaben	141,6	149,7	151,1	160,3	171,5	191,4	216,1	245,3
Saldo	- 8,1	- 7,3	- 9,1	- 15,2	- 19,6	- 4,7	- 5,3	- 14,0
darunter:								
Kapitalerträge (Saldo)	+ 10,3	+ 9,3	+ 9,0	+ 7,1	+ 9,2	+ 22,1	+ 27,6	+ 29,0
Reiseverkehr (Saldo)	- 23,1	- 23,7	- 25,4	- 27,9	- 28,9	- 28,3	- 30,4	- 33,4
4. Übertragungsbilanz	- 29,7	- 29,1	- 27,1	- 29,1	- 31,8	- 33,8	- 36,7	- 59,2
darunter:								
Nettobeitrag zum EG-Haushalt	- 7,3	- 8,3	- 8,2	- 10,4	- 13,0	- 13,4	- 11,6	- 19,1
Sonstige öffentliche Leistungen an das Ausland (netto)	- 10,8	- 9,9	- 8,2	- 8,4	- 7,6	- 9,7	- 13,8	- 28,7
Saldo der Leistungsbilanz	+ 27,9	+ 48,3	+ 85,8	+ 82,5	+ 88,9	+ 108,0	+ 76,1	- 32,9
B. Kapitalbilanz								
1. Langfristiger Kapitalverkehr								
a) Deutsche Anlagen im Ausland (Zunahme: -)	- 45,0	- 61,7	- 55,4	- 62,2	- 98,0	- 95,0	- 106,8	- 92,9
Direktinvestitionen	- 12,5	- 14,1	- 20,9	- 16,4	- 20,1	- 27,3	- 37,0	- 35,7
Ausländische Wertpapiere	- 15,7	- 31,5	- 21,3	- 24,5	- 72,6	- 50,2	- 23,5	- 26,3
Kredite an Ausländer	- 14,2	- 13,1	- 10,3	- 18,6	- 2,5	- 14,2	- 43,0	- 26,4
Übrige Kapitalanlagen im Ausland	- 2,6	- 3,0	- 3,0	- 2,7	- 2,8	- 3,3	- 3,3	- 4,4
b) Ausländische Anlagen im Inland (Zunahme: +)	+ 25,2	+ 48,8	+ 88,9	+ 40,2	+ 11,2	+ 72,5	+ 40,6	+ 65,0
Direktinvestitionen	+ 1,6	+ 1,7	+ 2,6	+ 3,4	+ 2,1	+ 13,2	+ 3,7	+ 4,8
Inländische Wertpapiere und Schuldscheine inländischer öffentlicher Stellen	+ 21,7	+ 36,3	+ 69,1	+ 22,0	- 3,3	+ 40,1	+ 15,8	+ 62,7
Wertpapiere	+ 17,4	+ 38,3	+ 74,1	+ 33,9	+ 7,6	+ 45,2	+ 17,1	+ 64,0
Schuldscheine	+ 4,3	- 2,0	- 5,0	- 12,0	- 10,8	- 5,1	- 1,3	- 1,3
Kredite an Inländer ³⁾	+ 1,9	+ 10,9	+ 17,3	+ 14,9	+ 12,6	+ 19,3	+ 21,4	- 2,4
Übrige Kapitalanlagen im Inland	- 0,0	- 0,1	- 0,1	- 0,1	- 0,2	- 0,1	- 0,4	- 0,1
Saldo des langfristigen Kapitalverkehrs	- 19,8	- 12,9	+ 33,4	- 22,0	- 86,8	- 22,5	- 66,2	- 27,9
2. Kurzfristiger Kapitalverkehr (Netto-Kapitalexport: -)								
a) Kreditinstitute	+ 0,1	- 27,7	- 59,0	- 6,6	- 20,2	- 56,7	+ 0,6	+ 39,8
Forderungen	- 17,8	- 33,4	- 65,8	- 15,4	- 30,1	- 81,0	- 24,3	+ 19,0
Verbindlichkeiten	+ 17,8	+ 5,7	+ 6,8	+ 8,9	+ 9,9	+ 24,3	+ 24,9	+ 20,8
b) Wirtschaftsunternehmen und Privatpersonen	- 16,1	- 14,1	- 56,7	- 11,5	- 21,4	- 51,6	- 19,4	+ 7,1
Finanzbeziehungen mit ausländischen Banken	- 3,3	- 13,5	- 49,3	- 10,8	- 10,7	- 38,1	- 24,7	+ 2,7
Finanzbeziehungen mit ausländischen Nichtbanken	- 4,0	+ 2,8	- 2,2	- 2,6	- 2,3	- 3,3	+ 6,8	+ 9,3
Handelskredite	- 8,7	- 3,5	- 5,2	+ 1,9	- 8,4	- 10,3	- 1,4	- 4,9
c) Öffentliche Stellen	- 1,6	+ 0,1	- 0,3	+ 1,0	+ 0,8	- 4,8	- 5,2	- 4,7
Saldo des kurzfristigen Kapitalverkehrs	- 17,7	- 41,7	- 116,0	- 17,0	- 40,8	- 113,1	- 23,9	+ 42,3
Saldo der Kapitalbilanz	- 37,5	- 54,6	- 82,6	- 39,0	- 127,5	- 135,6	- 90,1	+ 14,4
C. Saldo der statistisch nicht aufgliederbaren Transaktionen (Restposten)	+ 6,5	+ 8,1	+ 2,7	- 2,2	+ 3,9	+ 8,6	+ 25,0	+ 18,8
D. Ausgleichsposten zur Auslandsposition der Bundesbank ⁴⁾	+ 2,1	- 3,1	- 3,2	- 9,3	+ 2,2	- 2,6	- 5,1	+ 0,5
E. Veränderung der Netto-Auslandsaktiva der Bundesbank ⁵⁾ [A + B + C + D] (Zunahme: +)	- 1,0	- 1,3	+ 2,8	+ 31,9	- 32,5	- 21,6	+ 5,9	+ 0,8

^{o)} Ab Juli 1990 einschl. Transaktionen des Gebiets der ehemaligen DDR mit dem Ausland. - ¹⁾ Spezialhandel. - ²⁾ Hauptsächlich Lagerverkehr auf inländische Rechnung und Absetzung der Rückwaren und der Lohnveredelung. - ³⁾ Ohne Schuldscheine inländischer öffentlicher Stellen. - ⁴⁾ Gegenposten zu Veränderungen der Auslandsposition der Bundesbank, die nicht auf den Leistungs- und Kapitalverkehr mit dem Ausland zurück-

gehen: Änderungen des DM-Wertes der auf Fremdwährung lautenden Aktiva und Passiva der Bundesbank durch Neubewertung zum Jahresende sowie Differenzen zwischen den Transaktionswerten der Devisengeschäfte der Bundesbank und den zu Bilanzkursen ausgewiesenen Veränderungen der Auslandsposition. - ⁵⁾ Bewertet zu Bilanzkursen. Differenzen in den Summen durch Runden der Zahlen.

BBk

traditionellen Defizite im Dienstleistungsverkehr haben im vergangenen Jahr ebenfalls deutlich zugenommen. Im Ergebnis belief sich der Passivsaldo, einschließlich der bei der Einfuhr anfallenden Transport- und Versicherungskosten, auf 14 Mrd DM und war damit um nahezu 9 Mrd DM größer als ein Jahr zuvor. Zum einen sind die Ausgaben im Reiseverkehr aufgrund der hohen Einkommen in Westdeutschland, aber auch durch die zunehmende Reisetätigkeit ostdeutscher Bürger, abermals kräftig gewachsen. Zum anderen konnten die erhöhten Ausgaben nicht mehr wie in den Jahren zuvor durch steigende Netto-Kapitalertragseinnahmen ausgeglichen werden. Wegen der defizitären Leistungsbilanz hat das deutsche Netto-Auslandsvermögen, das in den Jahren zuvor laufend gestiegen war, 1991 etwas abgenommen. Außerdem fielen die Renditen der Anlagen im Ausland vor allem aufgrund der gesunkenen Dollarzinsen relativ niedrig aus, während die Zinslast auf die überwiegend in D-Mark denominierten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Ausland gestiegen ist.

Im langfristigen Kapitalverkehr mit dem Ausland fiel der Umschwung in Relation zu der veränderten Leistungsbilanzsituation vergleichsweise schwach aus. Mit Nettokapitalexporten in Höhe von 28 Mrd DM waren die Mittelabflüsse 1991 im Gesamtergebnis weniger als halb so hoch wie im vorangegangenen Jahr (66 Mrd DM). Dazu hat vor allem das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wieder verstärkte Anlageinteresse des Auslands am deutschen Kapitalmarkt beigetragen. Die deutschen Kapitalexporte bewegten sich dagegen brutto mit insgesamt 93 Mrd DM weiterhin in beträchtlichen Größenordnungen, wenn sie auch den im Vorjahr verzeichneten Spitzenwert (107 Mrd DM) nicht erreichten. Ebenso wie 1990 hatten daran die Direktinvestitionen der deutschen Unternehmen (36 Mrd DM) einen großen Anteil. Diese Auslandsinvestitionen stehen in erster Linie im Zusammenhang mit der Vorbereitung auf den EG-Binnenmarkt und dienen vor allem dem Ausbau von Stützpunkten deutscher Unternehmen und Finanzinstitute in den europäischen Partnerländern; natürlich spielen auch Kostenüberlegungen dabei eine Rolle. Die deutschen Kapitalanlagen an ausländischen Wertpapiermärkten hielten sich 1991 mit einem Gesamtbetrag von 26½ Mrd DM ungefähr auf dem Niveau des Vorjahrs. Allerdings haben sich dabei merkliche Gewichtsverschiebungen zwischen den einzelnen Anlagearten ergeben. Während 1990 ausländische Rentenwerte im Vordergrund des Interesses standen, waren 1991 die Zertifikate ausländischer Investmentfonds besonders lebhaft gefragt. Dabei handelte es sich vor allem um Fonds deutscher Banken, die seit Ende 1990 in Luxemburg aufgelegt werden und überwiegend in geldmarktnahen DM-Anlagen investieren. Die Nachfrage nach solchen Zertifikaten dürfte zum einen die attraktiven Renditen kurzfristiger Anlagen widerspiegeln, zum anderen aber auch mit steuerlichen Überlegungen zusammenhängen. Zeitweilig waren die steuerlichen Aspekte von Geldanlagen 1991 wieder in den Vordergrund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gerückt, nachdem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einem Urteil über die Zinsbesteuerung in Deutschland eine Neuregelung verlangt hatte. Die Bundesregierung hat jedoch frühzeitig deutlich gemacht, daß sie dabei nicht an eine unmodifizierte Wiedereinführung der Quellensteuer von 1989 denkt, sondern mit hohen Freibeträgen für die inländischen Steuerzahler und einer generellen Freistellung von Ausländern die Probleme dieses Besteuerungsmodells vermeiden will. Die Anlagetätigkeit deutscher Sparer an den ausländischen Wertpapiermärkten ließ bisher auch keine vergleichbaren Ausweichreaktionen erkennen, wie sie etwa 1988/89 im Zusammenhang mit der Einführung der Quellensteuer zu beobachten waren.

Nach anfänglich recht ausgeprägter Zurückhaltung hat sich das Anlageinteresse ausländischer Investoren am deutschen Kapitalmarkt in der zweiten Hälfte des vergangenen Jahres wieder merklich verstärkt. Vor allem deutsche Rentenwerte erfreuten sich angesichts des wachsenden Zinsvorsprungs von DM-Papieren und der deutlichen Aufwertungstendenz der D-Mark seit dem Sommer vorigen Jahres zunehmender Beliebtheit. Mit insgesamt 60½ Mrd DM

Geringere Abflüsse
im langfristigen
Kapitalverkehr

Hohe Zukäufe von
Rentenwerten durch
das Ausland

legten ausländische Käufer etwa dreimal soviel Mittel am Rentenmarkt an wie im Vorjahr, womit auch der bisherige Rekordbetrag solcher Kapitalimporte (von 59 Mrd DM im Jahre 1986) übertroffen wurde. Etwa drei Viertel dieser Summe flossen in öffentliche Anleihen, deren Nettoabsatz damit im Durchschnitt zu mehr als der Hälfte im Ausland untergebracht wurde.

Finanzierung der
Zahlungsbilanz durch
Geldimporte der
Banken

Im Ergebnis wurden 1991 das Defizit im Leistungsverkehr mit dem Ausland sowie die gleichzeitigen Mittelabflüsse im langfristigen Kapitalverkehr, die trotz der umfangreichen Anleihekäufe ausländischer Investoren am deutschen Markt per saldo zu verzeichnen waren, vollständig durch hohe kurzfristige Geldimporte finanziert. So flossen im vergangenen Jahr, einschließlich des Restpostens der Zahlungsbilanz gerechnet, insgesamt 61 Mrd DM an kurzfristigen Auslandsgeldern an den deutschen Markt. Dazu haben auch die Finanztransaktionen der Unternehmen beigetragen, durch die der deutschen Wirtschaft erstmals seit Jahren per saldo Gelder zugeflossen sind. Zum einen haben die Unternehmen ihre Euromarkt-Guthaben nicht mehr so kräftig aufgestockt wie im Vorjahr, und zum anderen nahmen sie in vermehrtem Umfang kurzfristige Kredite bei ausländischen Banken auf. Vor allem aber hatten inländische Kreditinstitute 1991 beträchtliche Geldzuflüsse zu verzeichnen, nachdem der relative Zinsvorteil von DM-Anlagen besonders im kurzfristigen Bereich merklich zunahm. Die kurzfristigen Auslandsforderungen der Banken gingen um 19 Mrd DM zurück, und die kurzfristigen Auslandsverbindlichkeiten nahmen um 21 Mrd DM zu. Im Ergebnis sanken damit die kurzfristigen Nettoforderungen der Banken gegenüber dem Ausland um 40 Mrd DM.

Leichter Rückgang
der Währungs-
reserven, aber kaum
veränderte Netto-
Auslandsaktiva der
Bundesbank

Die (Brutto-)Währungsreserven der Bundesbank sind 1991 transaktionsbedingt um 9½ Mrd DM zurückgegangen, obwohl der Bundesbank aus Zinseinnahmen und dem Dollarumtausch von US-Truppen Dollar im Gegenwert von 21 Mrd DM zugeflossen sind. Zur Dämpfung des Kursauftriebs des US-Dollars hat die Bundesbank vor allem in der ersten Jahreshälfte 1991 zeitweise Dollarbeträge in den Markt gegeben. Daneben waren einige Sondertransaktionen im vergangenen Jahr mit Dollarabgängen verbunden: Zum einen flossen durch die deutschen Zahlungen an das amerikanische Schatzamt im Zusammenhang mit dem Golfkrieg US-Dollar ab. Zum anderen verkaufte die Bundesbank US-Dollar direkt an eine ausländische Währungsbehörde gegen D-Mark. In diesem Zusammenhang sind gleichzeitig die Auslandsverbindlichkeiten der Bundesbank um rund 10 Mrd DM gesunken, so daß diese Transaktionen die Netto-Auslandsaktiva nicht verändert haben. Zum Jahresende 1991 wurde die Auslandsposition der Bundesbank – wie üblich – neu bewertet. Dabei wurde der Bilanzkurs für die Dollaranlagen von 1,4940 DM je Dollar auf 1,4500 DM herabgesetzt; der neue Bilanzkurs orientiert sich am historischen Tiefstkurs des US-Dollars vom Februar 1991. Der Buchwert der Netto-Auslandsaktiva hat sich dadurch um 2 Mrd DM vermindert. Seitdem sind die Netto-Auslandsaktiva der Bundesbank aufgrund laufender Dollarzuflüsse sowie durch die Verlagerung von DM-Guthaben ausländischer Währungsbehörden in den Markt wieder gestiegen. Bei Abschluß dieses Berichts waren sie gut 5 Mrd DM höher als zu Jahresbeginn.

Straffe Geldpolitik
stärkt Vertrauen in
die D-Mark

Die Wechselkursentwicklung der D-Mark stand 1991 im Spannungsfeld konträrer Einflüsse. Bis zur Jahresmitte überwogen zunächst die belastenden Momente, wie die Anpassungsfriktionen in der ostdeutschen Wirtschaft und die daraus resultierenden hohen Finanzierungsanforderungen an den Staatshaushalt. Im Verhältnis zum amerikanischen Dollar kam dessen Stärke im Zusammenhang mit der Golfkrise hinzu, die im weiteren Verlauf des ersten Halbjahrs von zunächst optimistischen Konjunkturerwartungen für die amerikanische Wirtschaft eine zusätzliche Stütze erhielt. Gleichzeitig begann die Verschlechterung des Preisklimas in Deutschland die D-Mark zusätzlich zu belasten. In dieser Zeit wertete sich die D-Mark gegenüber dem US-Dollar

Veränderung der Netto-Auslandsposition der Deutschen Bundesbank*)									
Mrd DM; Devisenzugang: +									
Zeit		Netto-Auslandsposition insgesamt	Operationen am Devisenmarkt 1)			Sonstige Transaktionen			
			insgesamt	davon:		insgesamt	davon:		
				DM-/Dollar-Markt	EWS-Interventionen und Schuldenregulierung 2)		Dollarzinseinnahmen und Dollareinnahmen von US-Truppen	öffentliche Stellen (netto)	übrige Devisenbewegungen (netto)
1990	Jan.	+ 1,0	- 0,1	- 0,1	-	+ 1,1	+ 1,5	- 0,9	+ 0,5
	Febr.	+ 1,8	-	-	-	+ 1,8	+ 2,1	- 0,7	+ 0,4
	März	- 1,3	- 1,5	- 1,5	-	+ 0,2	+ 1,5	- 0,8	- 0,5
	April	+ 1,1	-	-	-	+ 1,1	+ 1,6	- 0,8	+ 0,2
	Mai	+ 1,2	-	-	-	+ 1,2	+ 2,3	- 0,8	- 0,3
	Juni	+ 1,3	-	-	-	+ 1,3	+ 1,3	- 0,6	+ 0,6
	Juli	+ 0,6	- 1,5	-	- 1,5	+ 2,2	+ 1,8	- 0,4	+ 0,8
	Aug.	+ 0,4	- 0,5	-	- 0,5	+ 0,9	+ 2,2	- 0,6	- 0,7
	Sept.	+ 0,5	+ 0,3	-	+ 0,3	+ 0,2	+ 1,0	- 1,0	+ 0,2
	Okt.	+ 1,8	+ 0,1	-	+ 0,1	+ 1,7	+ 1,7	- 0,6	+ 0,5
	Nov.	+ 1,6	-	-	-	+ 1,6	+ 2,3	- 0,8	+ 0,1
	Dez.	+ 0,9	-	-	-	+ 0,9	+ 1,5	+ 0,1	- 0,7
	insgesamt	+ 11,0	- 3,2	- 1,6	- 1,6	+ 14,1	+ 21,0	- 7,9	+ 1,0
1991	Jan.	+ 0,5	-	-	-	+ 0,5	+ 1,6	- 1,7	+ 0,6
	Febr.	+ 1,1	+ 1,2	+ 1,2	-	- 0,1	+ 2,1	- 4,3	+ 2,2
	März	- 8,8	- 2,2	- 2,2	-	- 6,6	+ 1,3	- 7,4	- 0,6
	April	- 0,6	- 2,0	- 2,0	-	+ 1,4	+ 1,8	- 0,7	+ 0,3
	Mai	+ 0,8	- 1,1	- 1,1	-	+ 2,0	+ 2,5	- 0,9	+ 0,3
	Juni	+ 0,4	- 0,4	- 0,4	-	+ 0,7	+ 1,4	- 0,6	- 0,1
	Juli	+ 0,4	- 0,8	- 0,8	-	+ 1,2	+ 1,6	- 0,7	+ 0,4
	Aug.	+ 2,1	- 0,2	- 0,2	-	+ 2,4	+ 2,3	- 0,7	+ 0,8
	Sept.	+ 0,9	-	-	-	+ 0,9	+ 1,2	- 0,6	+ 0,3
	Okt.	+ 0,6	-	-	-	+ 0,6	+ 1,6	- 1,3	+ 0,2
	Nov.	+ 3,3	-	-	-	+ 3,3	+ 2,2	- 0,7	+ 1,9
	Dez.	- 0,5	-	-	-	- 0,5	+ 1,4	- 0,9	- 0,9
	insgesamt	+ 0,3	- 5,6	- 5,6	-	+ 5,9	+ 20,9	- 20,4	+ 5,4
1992	Jan.	+ 1,6	-	-	-	+ 1,6	+ 1,2	- 1,0	+ 1,3
	Febr.	+ 1,1	-	-	-	+ 1,1	+ 2,0	- 0,9	+ 0,0
	März	+ 2,5	-	-	-	+ 2,5	+ 1,1	- 0,7	+ 2,1
	1. Vj.	+ 5,2	-	-	-	+ 5,2	+ 4,3	- 2,6	+ 3,4

* Transaktionen erfaßt nach dem Buchungsdatum. - 1 Einschl. Operationen anderer Notenbanken, soweit sie die Auslandsposition der Bundesbank berühren. - 2 Schuldenregulierung: DM-Rückzahlungen von EWS-Partnern an die Bundesbank.
Differenzen in den Summen durch Runden der Zahlen. BBK

kräftig ab und verlor auch innerhalb des Europäischen Währungssystems an Terrain. Im Sommer kehrte sich die Entwicklung dann um. Erste Anpassungserfolge in Ostdeutschland schienen nun doch mehr Zuversicht zu rechtfertigen, und die Straffung der zinspolitischen Zügel stärkte das Vertrauen in die stabilitätspolitische Linie der Bundesbank. Gleichzeitig geriet der US-Dollar unter Druck, da sich die Erwartungen auf einen baldigen Aufschwung in den USA als unrealistisch herausstellten. Die D-Mark hat sich damit im Verlauf des zweiten Halbjahres 1991 wieder deutlich gefestigt. Dennoch zeigte sich in wiederholten Rückschlägen, wie empfindlich die deutsche Währung weiterhin auf ungünstige Nachrichten reagiert und welche Rolle dabei die jeweilige Einschätzung des US-Dollars spielt. Im Ergebnis lag der Außenwert der D-Mark gegenüber den Währungen von 18 Industrieländern am Ende des Jahres 1991 knapp unter dem Vergleichswert vom vorangegangenen Jahr. Seitdem ist der nominale Außenwert der D-Mark leicht zurückgegangen, wofür hauptsächlich die von günstigeren Daten über die Konjunktur in den USA ausgelöste Höherbewertung des US-Dollars entscheidend wa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 und ausländischen Preissteigerungen war damit der - reale - Außenwert der D-Mark im Durchschnitt des ersten Vierteljahrs von 1992 um etwa 1% niedriger als vor Jahresfrist.

Spezialaspekte der Integration des ostdeutschen Bankensystems

Der nach der deutsch-deutschen Währungsunion Mitte 1990 eingeleitete Umstrukturierungs- und Konsolidierungsprozeß des ostdeutschen Bankensystems ist im vergangenen Jahr gut vorangekommen. Die zuvor recht einseitigen Bilanzstrukturen haben sich aufgrund des kräftigen Wachstums des Kundenkreditgeschäfts und der wachsenden Präferenz der Kunden für längerfristige Anlageformen erkennbar normalisiert. Die Verschmelzung zu größeren Einheiten ergänzt das erfolgreiche Bemühen um wettbewerbsfähige Institute. Die westdeutsche Kreditwirtschaft war weiterhin – insbesondere über ihre Verbände und Schulungseinrichtungen – entscheidend beim Umbau der ostdeutschen Kreditwirtschaft beteiligt. Ohne die Mobilisierung finanzieller und personeller Ressourcen hätte mit einer erheblich längeren Anpassungsfrist gerechnet werden müssen. Die Fachkompetenz der Beschäftigten im ostdeutschen Kreditgewerbe hat deutlich zugenommen. Den Kunden wird inzwischen die gesamte Palette der Bankdienstleistungen angeboten.

Entwicklung
im ostdeutschen
Bankwesen

Die ostdeutschen Sparkassen und Kreditgenossenschaften haben ihre starke Stellung im Einlagengeschäft gegenüber den Niederlassungen westdeutscher Banken behaupten und zum Teil sogar ausbauen können. Der bis zum Sommer 1991 anhaltende Abzug von Einlagen konnte zu einem großen Teil wieder ausgeglichen werden. Innerhalb des Einlagenbestandes sind im Berichtsjahr neben der gesetzlich erforderlichen Umgliederung der früheren Buchspareinlagen auch erhebliche Umschichtungen zu höher verzinslichen Einlageformen erfolgt. Das wachsende Zinsbewußtsein äußerte sich insbesondere in einem markanten Anstieg der Termineinlagen; gleichzeitig besteht offenbar weiterhin eine ausgeprägte Liquiditätspräferenz, wie die weitgehend auf relativ hohem Niveau verharrenden Sichteinlagen anzeigen.

Im Kundenkreditgeschäft ist bei vielen ostdeutschen Banken eine zum Teil lebhaftere Expansion festzustellen. Der Sparkassensektor konnte seine Nichtbankenkredite fast verdoppeln (von rund 12,7 Mrd DM Ende 1990 auf rund 23,8 Mrd DM Ende 1991). Das traditionelle Kommunalkreditgeschäft spielt für die ostdeutschen Sparkassen praktisch noch keine Rolle, da die betreffenden öffentlichen Haushalte derzeit noch über ausreichende Mittelzuflüsse von anderer Seite verfügen (Zuweisungen im Rahmen der Aufbaufinanzierung; zinsverbilligte Mittel von Instituten mit Sonderaufgaben). Bei den Kreditgenossenschaften waren die Zuwächse im Kundenkreditgeschäft dagegen merklich geringer. Insgesamt gesehen bleibt der Anteil der Kundenkredite am Geschäftsvolumen der Sparkassen und Kreditgenossenschaften noch deutlich hinter den westdeutschen Vergleichszahlen zurück. Nachteilig wirkte sich auf die Kreditgewährung zudem aus, daß auf die Altkredite die Großkreditregelungen anzuwenden sind. Häufig bleibt dadurch kein Spielraum für neue Kredite. Weitere Hemmnisse sind darin zu sehen, daß den Banken in zahlreichen Fällen erfahrene Mitarbeiter fehlen und noch nicht alle Grundbuchämter in der Lage sind, zügig Eigentumsnachweise zu führen und dingliche Sicherheiten einzutragen.

Bei Inkrafttreten der Währungsunion gab e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571 Kreditinstitute. Ihre Zahl ist inzwischen auf 493 Institute gesunken. Diese unterhalten insgesamt 4 552 Zweigstellen. Hinzu kommen 1 259 Niederlassungen westdeutscher sowie zahlreiche Repräsentanzen ausländischer Banken. Damit erreicht die Bankstellendichte in Ostdeutschland die Hälfte des westdeutschen Durchschnittswertes. Durch bereits erfolgte bzw. beschlossene Fusionen ist die Zahl der Institute im Sparkassensektor bis zum Ende des Berichtsjahres um knapp 10% und im genossenschaftlichen Sektor um rund 20% gesunken. Die Entwicklung zu größeren und damit leistungsfähigeren Einheiten wird sich weiter fortsetzen. Bislang erreichen die ostdeutschen Sparkassen erst ein Drittel und die Kreditgenossenschaften die Hälfte des durchschnittlichen Geschäftsvolumens entsprechender westdeutscher Insti-

Umstrukturierung

tute. Im Zuge der sich belebenden Wirtschaftsentwicklung und durch die anhaltende Konzentration wird sich der Abstand schnell verringern.

„Altlasten“ Die Entwicklung des Bankensystem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ar auch im vergangenen Jahr wesentlich durch die Bewältigung von „Altlasten“ gekennzeichnet. Bei den früheren zentralen Instituten (Staatsbank Berlin, Deutsche Kreditbank, Deutsche Außenhandelsbank) ist mit der Abwicklung der vor dem 1. Juli 1990 entstandene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begonnen worden. Im Rahmen des früheren Außenhandels- und Valutamonopols begründete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konnten in größerem Umfang und zum Teil vorzeitig abgebaut werden. Im Zuge der Entschuldung der ursprünglich volkseigenen Unternehmen hat die Treuhandanstalt erste Tranchen der von den ostdeutschen Banken seinerzeit an die staatliche Wirtschaft ausgereichten Kredite mit schuldbefreiender Wirkung übernommen. Die Treuhandanstalt beabsichtigt, in einem weiteren Schritt diese Kredite bei den Altinstituten abzulösen und die Refinanzierung selbst zu übernehmen. Auf der Grundlage von Art. 25 Abs. 3 des Einigungsvertrages wird die Treuhandanstalt darüber hinaus landwirtschaftliche Unternehmen, an denen sie nicht beteiligt ist, zur Förderung der Strukturanpassung in begrenztem Umfang entschulden. Die Genossenschaftsbanken können zur bilanziellen Entlastung dieser Unternehmen nach § 16 Abs. 3 DM-Bilanzgesetz mit ihren Forderungen hinter andere Gläubiger zurücktreten, wodurch ein Ausweis dieser Beträge als Verbindlichkeiten in der DM-Eröffnungsbilanz der landwirtschaftlichen Unternehmen vermieden wird. Die Abwicklung des Altgeschäfts wird sich auf die Bilanzen der beteiligten Banken zum Teil deutlich auswirken.

Umstellungsrechnung, Eigenkapitalausstattung Auf den Tag des Inkrafttretens der Währungsunion haben die ostdeutschen Kreditinstitute eine Umstellungsrechnung zu erstellen, in der alle aus der Währungsumstellung hervorgegangenen, auf Deutsche Mark lautenden Aktiva und Passiva zu erfassen sind. Die Umstellungsrechnung gilt als Eröffnungsbilanz auf den 1. Juli 1990. Nach Maßgabe der Verordnung über die Bestätigung der Umstellungsrechnung war die geprüfte, festgestellte und mit einem Bestätigungsvermerk versehene Eröffnungsbilanz zusammen mit anderen Unterlagen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und der Bundesbank bis zum 15. März 1991 einzureichen. Da sich Erstellung und Prüfung der Eröffnungsbilanzen schwieriger als erwartet gestalteten, konnten die Banken diesen Termin nicht einhalten. Inzwischen sind die Eröffnungsbilanzen sämtlicher ostdeutscher Banken erstellt und geprüft worden. Allerdings steht in vielen Fällen die Einreichung der Unterlagen noch aus.

Die Ausgleichsforderungen sind so zu bemessen, daß die Kreditinstitute ein Eigenkapital von mindestens 4% der Bilanzsumme ausweisen können und den Grundsatz I gemäß § 10 des Kreditwesengesetzes höchstens mit dem Dreizehnfachen auslasten. Bezogen auf den Tag der Währungsumstellung verfügen die ostdeutschen Banken damit über eine Eigenkapitalquote, die nahezu der Baseler Eigenmittelempfehlung entspricht. Hierbei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es sich ausschließlich um Kernkapital handelt. Nach Maßgabe des DM-Bilanzgesetzes haben die Kreditinstitute in der Eröffnungsbilanz außerdem Pauschalwertberichtigungen in Höhe von 1% der Forderungen und von 0,5% der Eventualforderungen vom Gesamtbetrag der Kundenforderungen abzusetzen.

Mit diesen Regelungen soll den Kreditinstituten über die Bestandssicherung hinaus ein angemessenes Wachstum ermöglicht werden. Um sich angesichts des großen Geschäftspotentials Marktchancen zu erhalten, haben zahlreiche ostdeutsche Sparkassen und Kreditgenossenschaften die erwirtschafteten Gewinne zur Reservenbildung verwendet.

Nach Maßgabe des Staatsvertrages sind die Ausgleichsforderungen auf der Basis des 3-Monats-FIBOR zu verzinsen. Ab 2. Juli 1990 ist am Frankfurter Markt neben den damaligen FIBOR ein neuer FIBOR getreten, der nach der Eurozinismethode und auf breiterer Basis errechnet wird. Mit dem Haushaltsbegleitgesetz 1991 ist die Verzinsung der Ausgleichsforderungen ab 1. Juli 1991 auf den neuen FIBOR umgestellt worden.

Wegen der Verzögerungen bei der Erstellung und Prüfung der DM-Eröffnungsbilanzen konnten vo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bis Mitte März 1992 lediglich acht Ausgleichsforderungen von Sparkassen und Kreditgenossenschaften über insgesamt 102 Mio DM sowie die Ausgleichsforderungen der Postbank abschließend bearbeitet werden. Bis Ende 1994 sind die Zuteilungen nur vorläufig, so daß sich alle bis zu diesem Zeitpunkt nach § 36 Abs. 4 DM-Bilanzgesetz möglichen Änderungen der DM-Eröffnungsbilanz auf die Höhe der Ausgleichsforderungen noch auswirken werden. Vorläufig zugeweilte Ausgleichsforderungen können auf Antrag des Gläubigers bis zu 75%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umgewandelt werden. Dies erleichtert es den Banken, auf Zinsänderungen am Markt sowie auf die Anlagebedürfnisse der Kunden zu reagieren. Außerdem wird ihnen eine breite Basis für Lombardkredite und Wertpapierpensionsgeschäfte verschafft.

Nach Inkrafttreten der Währungsunion sind den ostdeutschen Kreditinstituten für eine Übergangszeit verschiedene Erleichterungen zugestanden worden. Diese betrafen die bankenaufsichtlichen Anforderungen und Meldepflichten, das statistische Meldesystem und die Mindestreserve. Sämtliche Übergangs- und Anpassungsregelungen sind inzwischen ausgelaufen.

Übergangs-
und Anpassungs-
regelungen

Aufgrund der Besonderheiten des früheren Rechnungswesens der ostdeutschen Banken ergaben sich insbesondere bei der Anpassung der Buchsparkonten an die Vorschriften des Kreditwesengesetzes größere Schwierigkeiten. Für die Umstellung war eine Übergangsfrist bis Ende 1990 vorgesehen. Zahlreiche ostdeutsche Banken konnten diese Frist nicht einhalten. Ihnen wurde deshalb eine Nachfrist bis zum 30. Juni 1991 gewährt und zugleich die Möglichkeit eröffnet, die Umstellung global vorzunehmen. Außerdem wurde ihnen bis Anfang 1992 für die Ermittlung der umgestellten Bestände ein Pauschalierungsverfahren zugestanden. Inzwischen ist fast der gesamte ursprüngliche Kontenbestand von über 10 Millionen Buchsparkonten an die Bestimmungen des Kreditwesengesetzes angepaßt worden.

Die Qualität der von den ostdeutschen Banken einzureichenden bankenaufsichtlichen und statistischen Meldungen entsprach anfänglich nicht den zu stellenden Anforderungen. Der Korrekturbedarf belastete die Institute, die Verbände und Aufsichtsstellen. Inzwischen konnte eine deutliche Qualitätssteigerung und die notwendige Verlässlichkeit der Informationsbasis erreicht werden.

Di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der Bundesbank, deren Aufbau im vergangenen Jahr vorerst abgeschlossen wurde, und ihre Filialen im Beitrittsgebiet wirken bei der Bankenaufsicht mit. Sie können dabei insbesondere ihre Ortsnähe zu den beaufsichtigten Kreditinstituten nutzen. Di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übt für einen Teil des Beitrittsgebietes alle Funktionen einer Hauptverwaltung aus. Den übrigen Teil betreuen westdeutsche Hauptverwaltungen.

Mitwirkung
der Bundesbank

Die Bankenverbände und die Bundesbank haben für Mitarbeiter und Geschäftsleiter ostdeutscher Kreditinstitute im vergangenen Jahr zahlreiche Schulungsmaßnahmen durchgeführt. Außerdem wurden von westdeutschen Partnerbanken in großem Umfang vorübergehend Mitarbeiter zur Verfügung

Leistungssteigerung
der Kreditinstitute

gestellt. Dadurch konnte die Leistungsfähigkeit der ostdeutschen Institute deutlich verbessert werden. Das Rechnungswesen der ostdeutschen Banken ist im vergangenen Jahr auf westdeutschen Standard umgestellt worden. Zahlreiche Geschäftsstellen und die technische Ausstattung der ostdeutschen Banken sind modernisiert worden. Angesichts des vorhandenen Marktpotentials und der dadurch zu erwartenden Geschäftsausweitung besteht aber nach wie vor ein großer Bedarf an bankgeschäftlich erfahrenen Mitarbeitern. Dies gilt insbesondere für das Kreditgeschäft. Deshalb müssen von den Banken und ihren Verbänden in Ost und West weiterhin alle Anstrengungen unternommen werden, um den Kenntnisstand der ostdeutschen Bankmitarbeiter zu verbessern. Insgesamt wurde von allen im ostdeutschen Bankwesen Beschäftigten ein großer persönlicher Einsatz gefordert.

Verbandsstruktur,
Einlagensicherung

Die ostdeutschen Sparkassen hatten am 20. März 1990 den Sparkassenverband der DDR gegründet, aus dem am 20. September 1990 der Ostdeutsche Sparkassen- und Giroverband hervorgegangen ist. Er erstreckte sich zunächst über das gesamte Beitrittsgebiet, die thüringischen Sparkassen treten nun jedoch dem hessischen Regionalverband bei. Von den sächsischen Kreditgenossenschaften ist am 19. Dezember 1990 der Genossenschaftsverband Sachsen ins Leben gerufen worden. Am 31. Dezember 1990 fusionierte der Berliner Genossenschaftsverband mit dem Brandenburgischen Raiffeisenverband zum Genossenschaftsverband Berlin-Brandenburg. Die Kreditgenossenschaften in den drei anderen neuen Bundesländern sind westdeutschen Regionalverbänden beigetreten. Die privaten Banken im Beitrittsgebiet werden vom Bankenverband mittel- und ostdeutscher Länder, der aus dem Bankenverband Berlin hervorgegangen ist, betreut. Mit wenigen Ausnahmen sind alle ostdeutschen Kreditinstitute Mitglied in der Einlagensicherungseinrichtung ihrer jeweiligen Institutsgruppe. Die Einlagen der ostdeutschen Bankkunden sind damit im gleichen Umfang abgesichert wie in Westdeutschland.

II. Anpassungen im Zahlungsverkehr

Der Einigungsvertrag sieht vor, daß bis zum 3. Oktober 1991 eine Neufassung des Bundesbankgesetzes die bestehenden Übergangsregelungen ablöst. Durch die Neufassung soll eine Neustrukturierung der Bundesbank mit dem Ziel einer Anpassung an die neuen Gegebenheiten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erreicht werden. Das Gesetzgebungsverfahren konnte bisher noch nicht abgeschlossen werden. Nach wie vor unterhält die Bundesbank daher nur 15 Filia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owie ein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in Berlin, die die Aufgaben einer Hauptverwaltung wahrnimmt. Ebenso unterstützen weiterhin verschiedene Landeszentralbanken bestimmte Filialen personell, technisch-organisatorisch sowie in Verwaltungs- und Bauangelegenheiten. Im Jahre 1991 hat sich die Zahl der Mitarbeiter der Deutschen Bundesbank in den neuen Bundesländern von ca. 1 500 auf knapp 1 900, darunter mehr als 1 500 Mitarbeiter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weiter erhöht.

Struktur
der Bundesbank

119

Nach dem Staats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war die Umstellung von Guthaben in Mark der DDR bis zum 6. bzw. 13. Juli 1990, in Ausnahmefällen bis zum 30. November 1990, bei den Geldinstituten zu beantragen. Seit dem 1. Dezember 1990 können die Geldinstitute in der ehemaligen DDR noch eingehenden Anträgen auf Währungsumstellung nicht mehr stattgeben. Nach dem Stand von Ende November 1991 sind insgesamt ca. 497 Mrd Mark der DDR umgestellt worden, nicht umgestellt wurden ca. 3 Mrd Mark.

Währungsumstellung

Ein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nachträgliche Umstellung von Kontoguthaben, über die Tilgung von Anteilrechten an der Altguthaben-Ablösungs-Anleihe, zur Änderung lastenausgleichsrechtlicher Bestimmungen und zur Ergänzung des Gesetzes über die Errichtung der „Staatlichen Versicherung der DDR in Abwicklung“ sieht unter anderem die Wiedereröffnung der Frist für Umstellungsanträge in Härtefällen vor. Danach soll natürlichen Personen die Möglichkeit gegeben werden, die Umstellung ihrer Kontoguthaben, sofern sie mindestens 500 Mark der DDR betragen, bei dem kontoführenden Geldinstitut bis zum 30. Juni 1993 nachträglich zu beantragen. Ein nachträglicher Umtausch von Bargeld ist nicht vorgesehen, um Mißbräuchen vorzubeugen.

Die im Beitrittsgebiet in einer Übergangszeit noch weiter verwendeten Umlaufmünzen der ehemaligen DDR zu 1, 5, 10, 20 und 50 Pfennig sind mit Wirkung vom 1. Juli 1991 außer Kurs gesetzt worden. Die Münzen haben damit ihre Gültigkeit verloren. Sie wurden aber noch bis zum 30. September 1991 von der Staatsbank Berlin und deren Filialen und Zweigstellen sowie von den Kassen der Deutschen Bundespost und der Deutschen Bundesbank im Beitrittsgebiet zum Nennwert in gültige gesetzliche Zahlungsmittel der Bundesrepublik umgetauscht. Das Metall der zurückgeflossenen Münzen wird soweit wie möglich wieder verwertet. Die anlässlich der Währungsumstellung zur Staatsbank Berlin zurückgeflossenen Banknoten der ehemaligen DDR im Wert von ca. 29 Mrd Mark sind inzwischen überprüft und anschließend von der Staatsbank Berlin entsorgt word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bestanden völlig unterschiedliche, nicht miteinander kompatible Zahlungsverkehrssysteme, die durch eine schrittweise Anpassung der DDR-Regelungen an die in der Bundesrepublik geltenden Verfahren und durch eine laufende Umstellung des Rechnungswesens der Ost-Kreditinstitute vom früheren ESER-System (*Einheitliches System der Elektronischen Rechentechnik*) auf westdeutsche Systeme einander angeglichen werden mußten. Hierbei war es erforderlich, für eine Übergangsphase Einschränkungen der gültigen Zahlungsverkehrsabkommen in einer besonderen Überleitungsvereinbarung vom Juni 1990 vorzunehmen. Diese Übergangsphase ist

Unbarer
Zahlungsverkehr

termingerecht am 31. Dezember 1991 mit der Umstellung der letzten Kreditinstitute abgeschlossen worden. Im Jahre 1991 sind im Rahmen des Überleitungsverfahrens von Westzahlungen ins ESER-System, mit der Staatsbank Berlin bzw. der Datenverarbeitungsgesellschaft Geldwirtschaft als Schnittstelle, noch über 37 Mio Überweisungen (im Betrag von ca. 40 Mrd DM) und über 78 Mio Lastschriften (im Betrag von ca. 15 Mrd DM) abgewickelt worden. Mit dem Ablauf der Gültigkeitsdauer der Überleitungsvereinbarung ist auch die Verpflichtung der westdeutschen Kreditinstitute und der auf Weststandard bereits umgestellten Ost-Kreditinstitute entfallen, alle bei ihnen für ESER-Kreditinstitute im West-Ost-Zahlungsverkehr beleghaft aufkommenden Überweisungen und Lastschriften in Datensätze umzuwandeln (sogenannte EZÜ- bzw. EZL-Pflicht).

- Normalisierung der Laufzeiten Die zunehmende Umstellung der Kreditinstitute und ihrer Kundschaft auf westdeutsche Buchungs- und Zahlungsverkehrsformen, die Reduzierung von Transportzeiten sowie weiter gewachsene Verarbeitungskapazitäten in den Rechenzentren des Kreditgewerbes und der Bundesbank haben im Jahre 1991 dazu beigetragen, daß die sonst üblichen Regellaufzeiten im beleglosen und beleghaften Zahlungsverkehr auch im West-Ost- und Ost-West-Zahlungsverkehr sowie innerhalb der neuen Bundesländer seitens des Kreditgewerbes weitgehend erreicht werden konnten. Beschwerden über zu lange Laufzeiten von Überweisungen sind der Bundesbank kaum noch bekannt geworden. Die vorübergehend aufgetretenen Rückstände in einzelnen Zahlungsverkehrszentren bei der Bearbeitung von Nachforschungsaufträgen wegen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ausgeführter Überweisungen sowie Scheck- und Lastschrifteinzüge konnten inzwischen durch aufwendige personelle und organisatorische Maßnahmen beseitigt werden.
- Unerledigte Zahlungen bei der Staatsbank Berlin Die oben erwähnte Überleitungsvereinbarung sah vor, daß nicht eingelöste Lastschriften aus dem Zahlungsverkehr West-Ost beleghaft (und damit zwingend im West-Standard an der Staatsbank Berlin vorbei) auf dem umgekehrten Inkassoweg an die ersten Inkassostellen zurückzugeben sind. In zahlreichen Fällen wurden die Lastschriften jedoch im ESER-System an die Staatsbank Berlin zurückgerechnet und konnten von dieser wegen systembedingt unvollständiger Angaben nicht weiter an die ersten Inkassostellen zurückgeleitet werden. Die Rückgaben beruhten zu einem großen Teil auf einem Automatismus, der im ESER-Verfahren verwendet werden konnte, um Lastschriften ohne individuelle Prüfung auf Deckung etc. an den Einreicher zurückzugeben. Mitunter erfolgte die Rückgabe durch die Zahlstellen zwar im West-Standard, aber nicht direkt an die erste Inkassostelle, sondern ebenfalls an die Staatsbank Berlin. Dies hat dazu geführt, daß sich bis September 1991 ca. 133 000 unbezahlt gebliebene Lastschriften und – aufgrund ähnlicher Ursachen – auch ca. 30 000 Überweisungen bei der Staatsbank angesammelt hatten. Die Bereinigung und Regulierung dieser Problemfälle erfolgt seit Ende 1991 in einem zwischen allen Beteiligten abgesprochenen Sonderverfahren. Dabei versuchen die ursprünglichen Zahlstel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nächst, die Lastschriften im Einvernehmen mit den Zahlungspflichtigen noch nachträglich zu deren Lasten einzulösen. Soweit der neuerliche Einlösungsversuch scheitert, erstellen die Zahlstellen Rücklastschriften (Retourenhüllen) und leiten diese über die Staatsbank Berlin an die ersten Inkassostellen weiter. Von diesen werden dann in aller Regel die Lastschrifteinreicher wieder belastet. Die offenen Gutschriftsposten werden entsprechend an die erstbeauftragten Institute zurückgegeben. Die Bereinigung soll bis Juni 1992 beendet sein.

III. Kreditpolitische Regelungen

1. Diskontkredit

121

Die Rediskontierung von Wechseln durch ostdeutsche Kreditinstitute wird durch Refinanzierungskontingente begrenzt. Refinanzierungskontingente werden für ostdeutsche rechtlich selbständige Kreditinstitute sowie für Zweigstellen ausländischer, in den westdeutschen Bundesländern nicht vertretener Kreditinstitute festgesetzt. Ist an einem ostdeutschen Kreditinstitut, für das ein Refinanzierungskontingent festgesetzt ist, ein westdeutsches Kreditinstitut mit 25% oder mehr beteiligt, so wird dessen Normkontingent entsprechend gekürzt.

Refinanzierungskontingente für ostdeutsche Kreditinstitute

Das Refinanzierungskontingent eines Kreditinstituts wird im Regelfall in Höhe des Normkontingents festgesetzt. Es kann unterhalb des Normkontingents festgesetzt werden, wenn besondere Umstände dies nahelegen.

Refinanzierungskontingente wurden erstmals zum 1. Juli 1990 in Höhe von rund 25 Mrd DM festgesetzt. Bemessungsgrundlage der Kontingente war zunächst die Bilanzsumme; das Normkontingent errechnete sich aus dieser durch Anwendung eines Vomhundertsatzes, dessen Höhe sich nach dem vom Zentralbankrat global festgelegten Gesamtbetrag der Refinanzierungskontingente richtete (Beschluß vom 17. Mai 1990). Nachdem die ostdeutschen Kreditinstitute ab 1. Februar 1991 zu den Wertpapierpensionsgeschäften zugelassen worden waren, wurde der Gesamtbetrag der Refinanzierungskontingente mit Wirkung vom 1. Juli 1991 auf rund 18 Mrd DM gekürzt, wobei die Bilanzsumme als Bemessungsgrundlage der Normkontingente noch beibehalten wurde (Beschluß vom 13. Juni 1991).

Mit Wirkung vom 2. Januar 1992 wurde der Gesamtbetrag der Refinanzierungskontingente auf 10 Mrd DM herabgesetzt. Hiervon steht denjenigen ostdeutschen Kreditinstituten, die werbendes Neugeschäft betreiben, ein Betrag von insgesamt 4 Mrd DM zur Verfügung. Er wurde jeweils zur Hälfte auf Basis der Bilanzsumme und der regulären Bemessungskriterien (Eigenkapital, Strukturkomponente, rediskontfähige Wechselkredite) verteilt. Für einige andere Kreditinstitute, deren Geschäftstätigkeit sich auf die Abwicklung von Altkrediten auf dem Gebiet der ehemaligen DDR beschränkt (sog. Abwicklungsinstitute), wurden Refinanzierungskontingente in Höhe von zusammen 6 Mrd DM festgesetzt. Diese Kontingente, unverändert aufgrund der Bilanzsummen berechnet, werden mit Ablauf des 30. Juni 1992 aufgehoben (Beschluß vom 5. Dezember 1991).

Diese Maßnahmen entsprachen früheren Absichtserklärungen des Zentralbankrats, das vergleichsweise hohe Rediskontvolumen der ostdeutschen Kreditinstitute zurückzuführen und ihren Refinanzierungsbedarf verstärkt über Wertpapierpensionsgeschäfte zu decken. Es ist beabsichtigt, im Verlauf von 1992 die Refinanzierungskontingente in reguläre Rediskont-Kontingente umzuwandeln, die ausschließlich auf der Grundlage der haftenden Mittel, der individuellen Geschäftsstruktur und der rediskontfähigen Wechselkredite der Kreditinstitute berechnet werden.

Wechselmitverbundene mit Sitz in Ostdeutschland gelten – abweichend von dem Beschluß des Zentralbankrats vom 20. Februar 1957 (S. 98) – vorläufig noch als „als zahlungsfähig bekannte Verpflichtete“ im Sinne des § 19 Abs. 1 Nr. 1 BBankG, sofern Zahlungsunregelmäßigkeiten oder sonstige Umstände, die die Zahlungsfähigkeit ausschließen, nicht bekannt sind (Beschluß vom 17. Mai 1990). Es ist jedoch vorgesehen, die Zahlungsfähigkeit auch der ostdeutschen Wechselmitverbundenen nach den für westdeutsche Unternehmen (Nichtbanken) üblichen Kriterien zu prüfen, sobald für sie Unterlagen vorliegen,

Bundesbankfähige Wechsel

die eine hinreichende Beurteilung ihrer finanziellen Verhältnisse ermöglichen (z. B. DM-Eröffnungsbilanzen, Jahresabschlüsse für das Jahr 1991).

Die Refinanzierungskontingente sollen grundsätzlich mit Handelswechseln genutzt werden, die aufgrund von Warenlieferungen oder von Dienstleistungen zwischen Unternehmen und/oder wirtschaftlich Selbständigen begeben worden sind und in der Regel die Unterschriften von drei als zahlungsfähig bekannten Verpflichteten tragen. Da den ostdeutschen Kreditinstituten bei Erricht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mit der ehemaligen DDR am 1. Juli 1990 Handelswechsel im Regelfall nicht zur Verfügung standen, konnten sie statt dessen eigene Solawechsel (Bank-Solawechsel) rediskontieren, die keine weitere Unterschrift tragen (Beschuß vom 17. Mai 1990). Die Sicherheit dieser Bank-Solawechsel war insoweit zusätzlich abgestützt, als – notfalls unbezifferte – vorläufige Forderungen gege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n die Bundesbank abzutreten waren.

Bis zum 31. Januar 1991 durften die Refinanzierungskontingente bis zur vollen Höhe mit derartigen Bank-Solawechseln genutzt werden. Danach wurde die Einreichung von Bank-Solawechseln schrittweise begrenzt, und zwar ab 1. Februar 1991 auf höchstens zwei Drittel, ab 1. Juli 1991 auf höchstens 50% des Refinanzierungskontingents. Dementsprechend konnte ein zunehmender Teil des Kontingents nur mit Handelswechseln genutzt werden, darunter ein Mindestanteil des Kontingents (ab 1. Februar 1991 10%, ab 1. Juli 1991 20%) nur mit Wechseln, aus denen wenigstens ein ostdeutsches Nichtbankunternehmen haftete (Beschlüsse vom 29. November 1990 und 13. Juni 1991).

Im Zusammenhang mit der Kürzung der Refinanzierungskontingente zum 2. Januar 1992 hat der Zentralbankrat die Regelung für ihre Inanspruchnahme erneut geändert. Seitdem dürfen ostdeutsche Kreditinstitute mit werbendem Neugeschäft ihr Refinanzierungskontingent nur noch zu höchstens 25% mit eigenen Solawechseln belegen, die keine weitere Unterschrift tragen; die restlichen 75% des Kontingents können nur mit Handelswechseln genutzt werden, wobei jedoch auf einen Mindestanteil an Wechseln mit der Unterschrift ostdeutscher Nichtbankunternehmen verzichtet wird. Die sog. Abwicklungsinstitute dürfen – hiervon abweichend – ihre zum 30. Juni 1992 auslaufenden Refinanzierungskontingente bis dahin noch in vollem Umfang mit eigenen Solawechseln belegen (Beschuß vom 5. Dezember 1991).

Auch die neuerliche Modifizierung der Nutzungsregelung dient dem Ziel,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Inanspruchnahme der Refinanzierungskontingente schrittweise der für westdeutsche Kreditinstitute üblichen Refinanzierungspraxis anzupassen. Nach der Umwandlung der Refinanzierungskontingente in reguläre Rediskont-Kontingente können Bank-Solawechsel, die keine weitere Unterschrift tragen, nicht mehr zum Rediskont eingereicht werden.

2. Lombardkredit

Lombardpfänder Ostdeutschen Kreditinstituten können, falls ihnen die im „Verzeichnis der bei der Deutschen Bundesbank beleihbaren Wertpapiere (Lombardverzeichnis)“ genannten Pfänder nicht oder nicht in ausreichendem Maße zur Verfügung stehen, Lombardkredite auch gegen Verpfändung eigener Solawechsel (Bank-Solawechsel) gewährt werden, die keine weitere Unterschrift tragen (Beschuß vom 17. Mai 1990). Diese Bank-Solawechsel sind allerdings grundsätzlich mit abgetretenen Zuteilungsansprüchen gege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zu unterlegen.

Es ist vorgesehen, Bank-Solawechsel als Lombardpfand abzulösen, sobald den ostdeutschen Kreditinstituten in größerem Umfang lombardfähige Wertpapiere

– gegebenenfalls auch an einer Börse amtlich notierte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aus der Umwandlung vorläufig zugeteilter Ausgleichsforderungen gege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 zur Verfügung stehen.

3. Geschäfte am offenen Markt

Ostdeutsche Kreditinstitute konnten mangels geeigneter Wertpapiere zunächst noch nicht zu Offenmarktgeschäften mit Rückkaufsvereinbarung (Wertpapierpensionsgeschäften) zugelassen werden. Zum Ausgleich erhielten sie höhere Refinanzierungskontingente. Seit 1. Februar 1991 ist ihnen die Teilnahme an den Wertpapierpensionsgeschäften gestattet (Beschluß vom 29. November 1990).

Offenmarktgeschäfte
über Wertpapiere
mit Rückkaufs-
vereinbarung

Druck: Johannes Weisbecker, Frankfurt am Main

Der Bericht erscheint im Selbstverlag der Deutschen Bundesbank, Frankfurt am Main. Er wird aufgrund des § 18 des Gesetzes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vom 26. 7. 1957 veröffentlicht. Der Bericht wird an Interessenten kostenlos abgegeben.

문서 번호 60

동부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 년 12 월 17 일

담당자 / 기관: Land Brandenburg, Land Mecklenburg-Vorpommern, Freistaat Sachsen, Land Sachsen-Anhalt

내용:

이 문서는 1992 년 12 월 17 일에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등 4 개의 신연방주가 체결한 저축금고협회에 관한 조약문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축금고 동부협회의 회원은 이 협약을 체결한 신연방주의 저축금고와 지역금고들이다. 본 협의회는 공법에 따른 법인체로 협회의 기관으로는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사무총장단이 있다.

협의회는 저축금고를 지원하고 저축금고 및 감독기구를 자문해 주며, 저축금고 조직을 관할하는 기구를 도와주고 회원조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 협의회는 각 연방주에 개별적으로 자문기구를 둔다. 이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제안권도 갖는다. 협의회는 개별적인 연방주에 직접 연관되는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그에 관해 미리 해당 연방주에 통보하여야만 한다. 협의회는 나아가 감독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그리고 협의회는 각 연방주의 감독을 받는다. 각 연방주의 감사원은 공동으로 협회의 예산과 회계를 검토한다. 나아가 조약을 체결한 연방주들은 통일된 저축금고법을 도입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 합의문은 모든 주들이 승인서를 제출하면 효력을 발휘하며 그 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출처: <https://www.osv->

[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OSV_Staatsvertrag_Lesefassung-26-05-09.pdf](https://www.osv-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OSV_Staatsvertrag_Lesefassung-26-05-09.pdf)

Staatsvertrag über den Ostdeutschen Sparkassenverband

vom 17. Dezember 1992, geändert durch die Staatsverträge vom 29. September 2000, 2. Mai 2005 und 28. November 2008

Die Länder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der Freistaat Sachsen und das Land Sachsen-Anhalt schließen im Bewusstsein der Verantwortung für eine funktionsfähige öffentlich-rechtliche Verbandsstruktur der Sparkassen und ihrer Träger sowie im Interesse der Wettbewerbsfähigkeit der Sparkassen und der Beachtung der regionalen Interessen nachstehenden

Staatsvertrag:

§ 1

Rechtsnatur, Sitz und Organe

- (1) Mitglieder in dem Ostdeutschen Sparkassenverband (Verband) sind die Sparkassen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dem Freistaat Sachsen und dem Land Sachsen-Anhalt (Vertragsländer) sowie die kommunalen Mitglieder. Kommunale Mitglieder sind bei Sparkassen mit kommunalem Träger die Träger, bei Sparkassen mit mehreren Trägern die Mitträger und bei Zweckverbandssparkassen zusätzlich die Kommunen, die Mitglieder der jeweiligen Zweckverbände sind. Kommunale Mitglieder sind bei Sparkassen der Sachsen-Finanzgruppe neben der Sachsen-Finanzgruppe auch die ehemaligen kommunalen Träger der Sparkassen der Sachsen-Finanzgruppe, bei Zweckverbänden als ehemaligen kommunalen Trägern zusätzlich die Kommunen, die Mitglieder der jeweiligen Zweckverbände sind. Das Gesamtstimmrechtsverhältnis zwischen den Mitgliedern aus den vier Ländern ist in der Satzung ausgewogen zu gestalten.
- (2) Der Verband ist eine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Seine Rechtsverhältnisse werden durch Satzung geregelt, die im Amtsblatt des die Staatsaufsicht ausübenden Vertragslandes zu veröffentlichen ist. Die Satzung und ihre Änderungen bedürfen der Genehmigung des für die Staatsaufsicht zuständigen Landesministeriums (§ 3).
- (3) Der Verband hat innerhalb von drei Jahren ab In-Kraft-Treten dieses Staatsvertrages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von Wirtschaftlichkeit und Sparsamkeit über seinen dauerhaften Verbandssitz zu entscheiden.

(4) Organe des Verbandes sind:

- 1) die Verbandsversammlung;
- 2) der Verbandsvorstand;
- 3) das Geschäftsführende Vorstandsmitglied.

In der Verbandsversammlung gilt grundsätzlich für die Mitglieder das Kapitalstimmrecht, soweit in der Satzung nichts anderes geregelt wird. In Personalwahlangelegenheiten und bei Satzungsänderungen wird nach Köpfen abgestimmt.

(5) Die Mitglieder der Verbandsorgane handeln in dem ihnen von der Satzung zugewiesenen eigenen Aufgabenbereich nach ihrer freien Überzeugung. Sie sind insoweit an Weisungen nicht gebunden.

§ 2 Aufgaben

- (1) Der Verband hat die Aufgabe, das Sparkassenwesen zu fördern, insbesondere die Sparkassen und die Aufsichtsbehörden zu beraten, die Träger in Fragen des Sparkassenwesens zu unterstützen und Prüfungen bei Mitgliedssparkassen durchzuführen. Der Verband ist zur Gleichbehandlung aller Mitglieder, unabhängig von Art und Struktur, verpflichtet. Der Verband hat die Grundsätze der Wirtschaftlichkeit und Sparsamkeit zu beachten (§ 7 Abs. 1 der Landeshaushaltsordnung des Landes Brandenburg vom 1. April 1991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1. April 1999 (GVBl. I S. 106)).
- (2) Der Verband unterhält in jedem der Vertragsländer einen Landesbeirat. Dieser wird von den Mitgliedern in den jeweiligen Länder gewählt. Die Satzung trifft die näheren Bestimmungen zur Wählbarkeit und zur Einräumung von Gastrechten. Die Landesbeiräte haben die Aufgabe, den Verband zu allen landesspezifischen Besonderheiten des Sparkassenwesens zu beraten und die Erfüllung der Verbandsaufgaben auf Landesebene zu unterstützen.
- (3) Jeder Landesbeirat hat das Recht, in der Verbandsversammlung und im Verbandsvorstand gehört zu werden sowie Anträge zur Beschlussfassung in diesen Organen zu stellen. Er hat weiter das Recht, bis zu zwei Vertreter der Träger in die überregionalen und regionalen Arbeitsgemeinschaften des Verbandes als Mitglieder zu entsenden. Er kann Vertreter des Verbandes und Sachverständige hinzuziehen, um über Fragen des Sparkassenwesens unterrichtet zu werden. Die Landesbeiräte wählen jeweils vier Mitglieder für den Verbandsvorstand.
- (4) Der Verband unterrichtet im Voraus die Vertragsländer über beabsichtigte Entscheidungen, die sie betreffen oder die für die Regionen der Vertragsländer von erheblicher Bedeutung sind. Dies gilt auch für Entscheidungen nach § 3 Abs. 3. Zur Koordinierung der gemeinsamen Belange des Verbandes und der Vertragsländer findet mindestens einmal jährlich eine gemeinsame Sitzung des Verbandsvorstandes mit den für die Sparkassenaufsicht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der Vertragsländer statt.

- (5) Der Verband unterhält eine Prüfungsstelle. Die Prüfungsstelle ist an die fü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en geltenden Vorschriften und Berufsgrundsätze gebunden, führt ihre Prüfungen nach den für Prüfungsgesellschaften geltenden Prüfungsstandards in eigener Verantwortung durch und hat sich als Abschlussprüfer registrieren zu lassen. Sie ist bei der Durchführung von Prüfungen unabhängig und nicht an Weisungen der Verbandsorgane, die Umfang, Art und Weise oder Ergebnis der Prüfung betreffen, gebunden. Die mit Prüfungen befassten Personen nehmen keine Aufgaben der verbandspolitischen Interessenvertretung des Verbandes wahr. Die Prüfungsstelle führt bei Sparkassen und bei externen Stellen des Rechnungswesens Prüfungen durch, die vorgeschrieben, von der Sparkasse oder einer Aufsichtsbehörde veranlasst worden sind oder auf eigener Zuständigkeit beruhen, insbesondere die Prüfungen nach den Regelungen der Satzung für den Sparkassenstützungsfonds. Bestellung und Abberufung des Leiters der Prüfungsstelle und seines Stellvertreters bedürfen der Zustimmung der Staatsaufsicht.

§ 3 Staatsaufsicht

- (1) Der Verband unterliegt der Staatsaufsicht (Rechtsaufsicht) der Vertragsländer. Die Staatsaufsicht umfasst auch die Prüfung der Verpflichtung nach § 2 Abs. 1 Satz 3. Die Staatsaufsicht wird - entsprechend der alphabetischen Reihenfolge - im fünfjährigen Wechsel jeweils durch das für die Sparkassenaufsicht zuständige Landesministerium ausgeübt. § 31 Abs. 1 Satz 2, Abs. 2 bis 5 des Brandenburgischen Sparkassengesetzes vom 26. Juni 1996 (GVBl. I S. 210)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 (2) Die Staatsaufsicht erstreckt sich auch auf die Prüfungsstelle und umfasst die Einhaltung der sich aus § 2 Abs. 5 ergebenden Pflichten. Sie kann hierzu bei Bedarf Untersuchungen durchführen, hierzu auch Dritte heranziehen, und geeignete Maßnahmen anordnen. Erhält die Staatsaufsicht konkrete Hinweise auf Pflichtverstöße seitens der zuständigen Stellen eines anderen Mitgliedsstaates der Europäischen Union, hat sie diese zu untersuchen und geeignete Maßnahmen anzuordnen. Sie kann bei erheblichen Pflichtverstößen vom Verband die Abberufung des Leiters der Prüfungsstelle und seines Stellvertreters verlangen. Die Staatsaufsicht in diesem Bereich wird von Personen wahrgenommen, die in den für die Abschlussprüfung relevanten Bereichen über entsprechende Kenntnis verfügen und in den letzten drei Jahren vor ihrer Beauftragung nicht persönliches Mitglied der Wirtschaftsprüferkammer waren. Das gemäß Absatz 1 Satz 3 zuständige Landesministerium legt die Überwachung in diesem Bereich planmäßig offen. Im Übrigen gilt Abs. 1 entsprechend.
- (3) Die für die Sparkassenaufsicht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haben ein Recht auf Teilnahme an den Sitzungen der Verbandsversammlung und der jeweiligen Landesbeiräte. Sie haben das Recht, in den Sitzungen der Verbandsversammlung sowie der jeweiligen Landesbeiräte Stellung zu nehmen.
- (4) Der Verband ist verpflichtet, bei der Errichtung von rechtlich unselbständigen und rechtlich selbständigen Einrichtungen und bei Beteiligungen des Verbandes die

regionale Ausgewogenheit angemessen zu berücksichtigen. Entsprechendes gilt für mittelbare Beteiligungen des Verbandes.

§ 4 Einnahmen

- (1) Einnahmen des Verbandes sind insbesondere die Verbandsumlage, Prüfungsgebühren, Zins-, Beteiligungs- und Grundstückserträge.
- (2) Der Verband hat bei der Bemessung der zur Deckung der Verbandskosten notwendigen Finanzierungsbeiträge die Inanspruchnahme von Verbandsleistungen in wirtschaftlich vertretbarem Umfang zu berücksichtigen.

§ 5 Jahresabschluss

- (1) Spätestens sechs Wochen vor Beginn des Geschäftsjahres legt das Geschäftsführende Vorstandsmitglied dem Vorstand und den für die Sparkassenaufsicht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den Entwurf des Wirtschaftsplanes, die Fortschreibung der mittelfristigen Unternehmensplanung einschließlich der Beteiligungen und eine Berechnung für die im kommenden Jahr zu erhebenden Umlagen vor.
- (2) Das Geschäftsführende Vorstandsmitglied stellt bis spätestens drei Monate nach Ablauf des Geschäftsjahres eine Bilanz mit Gewinn- und Verlustrechnung nebst Anhang (Jahresabschluss) sowie einen Lagebericht nach den kaufmännischen Grundsätzen ordnungsmäßiger Buchführung auf. Die für große Kapitalgesellschaften geltenden Ansatz-, Bewertungs- und Gliederungsvorschriften des Handelsgesetzbuche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 (3) Der Jahresabschluss wird durch einen Abschlussprüfer geprüft. Die Bestellung bedarf der Zustimmung durch die Staatsaufsicht im Einvernehmen mit dem Landesrechnungshof des Landes, das die Staatsaufsicht führt. Hinsichtlich der Prüfungsschwerpunkte hat sich der Verband mit dem in Satz 2 genannten Landesrechnungshof ins Benehmen zu setzen. Der Entwurf des Prüfungsberichts wird in dem zuständigen Ausschuss des Vorstandes unter Anwesenheit der für die Sparkassenaufsicht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besprochen.
- (4) Innerhalb von zehn Monaten nach dem Ende des Geschäftsjahres beschließt die Versammlung über die Feststellung von Jahresabschluss und Lagebericht sowie die Entlastung des Vorstandes und des Geschäftsführenden Vorstandsmitgliedes. Für die Offenlegung gelten die Vorschriften des Handelsgesetzbuches für große Kapitalgesellschaften entsprechend. An die Stelle des Handelsregisters tritt die von der Landesregierung des Landes Brandenburg bestimmte Stelle.

§ 6 **Prüfung durch die Landesrechnungshöfe**

Die Landesrechnungshöfe der Vertragsländer prüfen gemeinsam die Haushalts- und Wirtschaftsführung des Verbandes. Die Prüfung der Betätigung des Verbandes bei Unternehmen in der Rechtsform des privaten Rechtes, an denen er unmittelbar oder mittelbar beteiligt ist, erfolgt unter Beachtung kaufmännischer Gesichtspunkte. Gehören dem Verband Anteile an Gesellschaften in dem in § 53 des Haushaltsgrundsätzegesetzes bezeichneten Umfange, so hat er darauf hinzuwirken, dass den Landesrechnungshöfen in der Satzung oder im Gesellschaftsvertrag die in § 54 des Haushaltsgrundsätzegesetzes vorgesehenen Befugnisse eingeräumt werden. Der Landesrechnungshof eines Vertragslandes kann durch Vereinbarung Prüfungsaufgaben auf den Landesrechnungshof eines anderen Vertragslandes übertragen oder von diesem Prüfungsaufgaben übernehmen. Bei der Durchführung der Prüfung können sich die Landesrechnungshöfe sachverständiger Dritter bedienen. Die Prüfungsergebnisse werden ausschließlich dem Verband sowie den für die Sparkassenaufsicht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zugeleitet.

§ 7 **Anzuwendendes Recht**

Soweit dieser Vertrag keine besonderen Bestimmungen enthält, ist hinsichtlich der Rechtsverhältnisse des Verbandes, auf die Landesrecht Anwendung findet, das Landesrecht des Landes Brandenburg maßgebend.

§ 8 **Sparkassenrecht**

- (1) Die Vertragsländer erklären ihre Absicht, ein weitgehend einheitliches Sparkassenrecht gemeinsam zu erhalten und fortzuentwickeln.
- (2) Die Regelungen des Sparkassenstützungsfonds des Verbandes gelten auch für die Sachsen-Finanzgruppe.
- (3) Ein Eintritt des Stützungsfonds wie bei Sparkassen mit einem unmittelbaren kommunalen Träger setzt voraus, dass die Sachsen-Finanzgruppe Aufgaben wahrnimmt, die der Ausübung von Kapitaleignerfunktionen bei öffentlich-rechtlichen Kreditinstituten gleichgesetzt werden können.

§ 9 **Vertragsdauer**

Dieser Staatsvertrag gilt für unbestimmte Zeit. Er kann von jedem der Vertragsländer zum Schluss eines Kalenderjahres mit einer Frist von zwei Jahren gekündigt werden. Die Kündigung kann erstmals zum 31. Dezember 2005 erfolgen. Sie ist gegenüber jedem anderen Vertragsland schriftlich zu erklären. Kündigt ein Vertragsland, kann jedes andere innerhalb von sechs Monaten nach Zugang der Kündigung den Staatsvertrag zu demselben Zeitpunkt kündigen. Zwischen den übrigen Vertragsländern bleibt der Staatsvertrag in Kraft.

§ 10 Ausscheiden

Scheiden Sparkassen und ihre Träger aus dem Ostdeutschen Sparkassenverband aus, so können die Sparkassen nur ihren nominalen Anteil am Stammkapital nach Ablauf von fünf Jahren nach dem Ausscheiden zurückfordern. Für diesen Zeitraum steht ihnen eine angemessene Verzinsung ihres nominalen Stammkapitalanteils zu. Der Ostdeutsche Sparkassenverband ist nach dem Ausscheiden jederzeit zur Rückzahlung dieses Stammkapitalanteils befugt.

§ 11 Inkrafttreten

Dieser Staatsvertrag tritt mit dem Tage in Kraft, an dem die letzte der von den Vertragsländern ausgefertigten Ratifikationsurkunden in der Staatskanzlei des Landes Brandenburg hinterlegt ist.

(In Kraft getreten am 15. Mai 2009)

문서 번호 61

서독을 방문한 동독주민에게 제공된 환영금의 재원과 총액

1993 년 3 월 9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의회, 연방내무부 차관 바펜슈미트, 연방의회 의원

내용:

이 문서는 사민당 소속 슈미트위원의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 내무차관인 바펜슈미트가 답한 것이다.

서독은 1959 년 이후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주민들에게 환영금을 지불해 왔다. 이를 위한 비용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나아가 1964 년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환영금 외에도 각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가로 환영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수치는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1984 년에서 1989 년까지 연방정부는 약 20 억 마르크를 환영금으로 지출하였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445, S. 11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Eduard Lintner
vom 10. März 1993**

Die Evangelische Akademie Tutzing hatte als Vertreter der Bundesregierung Staatssekretär Franz Kroppenstedt vo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zur Teilnahme an der für den 3./4. Februar 1993 vorgesehenen Tagung „Sie wirken bei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mit – Neuvermessungen der politischen Bildung“ eingeladen. Weil Herr Staatssekretär Kroppenstedt zu diesem Zeitpunkt verhindert war, hatte der Leiter der Abteilung „Innenpolitische Grundsatzfragen, Politische Bildun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Manfred Speck, zugesagt, an seiner Stelle an der Tagung teilzunehmen. Die kurzfristige Absage der Tagung durch die Evangelische Akademie Tutzing mit Schreiben vom 20. Januar 1993 wurde von der Bundesregierung mit Überraschung zur Kenntnis genommen.

- | | |
|---|--|
| 20. Abgeordneter
Wilhelm Schmidt
(Salzgitter)
(SPD) | Welche Gesamtsumme machten die seinerzeit gezahlten sog. Begrüßungsgelder an die Besucher/Besucherinnen aus der DDR aus, und aus welchen öffentlichen Kassen wurden diese Beträge aufgebracht? |
|---|--|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Horst Waffenschmidt
vom 9. März 1993**

Die Bargeldhilfe (das sogenannte Begrüßungsgeld) wurde von der Bundesregierung seit 1959 in unterschiedlicher Höhe gezahlt. So fand 1964 durch Beschluß des Kabinetts eine Erhöhung von 15 DM auf 30 DM pro Person und Kalenderjahr statt. 1982 erfolgte eine Ausdehnung der Zahlung auf die zweite Besuchsreise pro Person und Kalenderjahr. 1987 wurde die Bargeldhilfe auf 100 DM pro Kalenderjahr angehoben.

Ab 1964 stockten die Bundesländer und einzelne Kommunen die Bargeldhilfe durch eigene Leistungen in unterschiedlicher Höhe auf.

Daten über die Gesamtsumme, die aus den öffentlichen Kassen gezahlt wurde, liegen nicht mehr vor.

In den Jahren 1984 bis 1989 wurden aus Bundesmitteln für die Bargeldhilfe folgende Beträge gezahlt:

1984	45 369 780 DM
1985	48 120 330 DM
1986	54 835 920 DM
1987	90 150 644 DM
1988	260 622 654 DM
1989	1 672 804 000 DM.

- | | |
|--|--|
| 21. Abgeordnete
Erika Steinbach-Hermann
(CDU/CSU) | In welcher Höhe wurden in den Jahren 1990 bis 1992 über welche Mittlerorganisationen wirtschaftsbezogene und insbesondere dem Aufbau der Landwirtschaft dienende Hilfen zur Unterstützung und zur Schaffung von Lebensgrundlagen für die deutschen Minderheiten in der UdSSR/GUS bzw. in Polen bereitgestellt? |
|--|--|

문서 번호 62

사회시설의 구채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1993 년 6 월 3 일

담당자 / 기관: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 (PDS/Linke Liste)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바라라 훔 민사당 의원이 제출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이 답변에서 연방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일조약 21 조 21 항에 따라 동독의 사회시설의 소유권은 대부분 구동독의 지자체로 양도되었다. 그 결과 구동독지역의 지자체가 동독체제 하에서 사회시설이 책임져야 했던 채무도 지자체가 책임지게 되었다. 독일신용은행이 사회시설에 제공한 크레디트는 1990 년 7 월 1 일 현재 약 50 억 DM 이었다. 구동독 지자체의 사회시설이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신탁청이 담당하는 일이 아니다. 구동독의 주택회사가 안고 있는 구채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부채이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1990 년 10 월 3 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관계는 새로운 관계에 맞게 조절한다는 특별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독의 법을 따라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통일조약 22 조 4 항은 동독 주택회사의 주택이 안고 있는 부채는 신연방주의 지자체로 양도된다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신연방주 지자체의 현재 재정상황이 그렇게 열악한 것만은 아니어서 사회시설의 구채무를 자체적인 예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5075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Dr. Barbara Höll und der Gruppe
der PDS/Linke Liste
— Drucksache 12/4882 —

Altschulden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Die „Süddeutsche Zeitung“ meldete am 3. Mai 1993, die ostdeutschen Städte weigerten sich, der Deutschen Kreditbank AG eine Summe von mindestens 6,3 Mrd. DM an Altschulden zu bezahlen, die sich aus den Baukosten für Kindergärten, Altenheime und ähnliche Einrichtungen in der DDR ergibt. Die Städte seien zwar Träger dieser Einrichtungen, bestritten aber, daß es sich um rechtsverbindliche Schulden an den Bund handele.

In einer dpa-Meldung vom 2. Mai 1993 wurde berichtet, der Deutsche Städtetag empfehle den Städten, es entweder auf einen höchstrichterlichen Entscheid in dieser Frage ankommen zu lassen oder selbst einen Musterprozeß zu führen.

Im Herbst 1992 hatte die Deutsche Kreditbank AG ostdeutsche Kommunen angeschrieben und diesen erklärt, von dem Moratorium für die Kreditverpflichtungen der kommunalen und genossenschaftlichen Wohnungsunternehmen wären Altkredite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nicht erfaßt. Die Deutsche Kreditbank AG, die als Gläubiger des überwiegenden Teils dieser Kredite auftrat, hielt die ostdeutschen Kommunen an, Vereinbarungen über die weitere Abwicklung, insbesondere hinsichtlich Zins und Tilgung, zu treffen und durch Unterschrift Erhalt und Gültigkeit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zu bestätigen.

1. Worauf gründet die Deutsche Kreditbank AG gegenüber den ostdeutschen Kommunen Forderungen in einer Gesamthöhe von 6,3 Mrd. DM?

Bis zum 30. Juni 1990 wurden für den Bau gesellschaftlicher Einrichtungen, die in der DDR als staatliche Einrichtungen bezeichnet wurden, durch die Staatsbank Kredite an die VEB Kommunale Wohnungsverwaltung bzw. VEB Gebäudewirtschaft ausgereicht. Die Finanzierung des Baus staatlicher Einrichtungen der Bereiche Bildungswesen, Gesundheitswesen, Sozial-

Die Antwort wurde namens der Bundesregierung mit Schreiben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vom 25. Mai 1993 übermittelt.

Die Drucksache enthält zusätzlich – in kleinerer Schrifttype – den Fragetext.

wesen, Kultur, Sport, Naherholung und von Bauten des Staatsapparates erfolgte auf der Grundlage der Verordnung über die Finanzierung des Baus volkseigener Wohnungen und des Baus staatlicher Einrichtungen vom 15. Dezember 1970 (GBl. I 1970, S. 764 ff.).

Nach Artikel 2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steht das Vermögen, das am 3. Oktober 1990 unmittelbar der Erfüllung von Verwaltungsaufgaben diene, demjenigen Träger öffentlicher Verwaltung zu, der nach der Kompetenzordnung des Grundgesetzes für die Verwaltungsaufgabe zuständig ist, deren Erfüllung der Vermögenswert am 1. Oktober 1989 diene. Die gesellschaftlichen Einrichtungen sind danach überwiegend in das Eigentum der Kommunen übergegangen. Sie sind damit auch Schuldner der Kredite für die gesellschaftlichen Einrichtungen geworden, die auf sie übergegangen sind.

2. In welcher Höhe hatte die Deutsche Kreditbank AG zum 1. Juli 1990 Kredite ausgereicht?

Die Kreditausreichunge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beliefen sich zum 1. Juli 1990 (einschließlich der im ersten Halbjahr 1990 aufgelaufenen Zinsen) auf 5,0 Mrd. DM.

Die Kreditforderunge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beliefen sich insgesamt zum 1. Juli 1990 auf 126,1 Mrd. DM.

3. In welcher Höhe waren bei der Deutschen Kreditbank AG zum 31. Dezember 1992 Altkredite verblieben?

Die Forderunge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betragen zuzüglich der seit 1. Juli 1990 gestundeten Zinszahlungen am 31. Dezember 1992 6,3 Mrd. DM.

Die Kreditbestände der Deutschen Kreditbank AG betragen insgesamt am 31. Dezember 1992 95,2 Mrd. DM.

4. Hat die Treuhandanstalt Altkredite der Deutschen Kreditbank AG entschuldet?

Wenn ja, in welcher Höhe?

Die Treuhandanstalt hat bis zum 31. Dezember 1992 Altkredite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n Treuhandunternehmen in einem Umfang von 31,2 Mrd. DM übernommen.

Die Entschuldung der Kredite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der Kommunen ist nicht Aufgabe der Treuhandanstalt.

5. Ist der Bundesregierung bekannt, daß die im Zusammenhang mit der Errichtung von Altenheimen, Kindergärten und gesellschaftlichen Einrichtungen entstandenen und jetzt den ostdeutschen Kommunen, Wohnungsbaugesellschaften und Wohnungsbaugenossenschaften in Rechnung gestellten Schulden aus Investitionen resultierten, die aufgrund der Staatshaushaltsordnung der DDR den Wohnungswirtschaftsunternehmen angelastet wurden?

Nach § 2 der Verordnung vom 15. Dezember 1970 über die Finanzierung des Baus volkseigener Wohnungen und des Baus staatlicher Einrichtungen erfolgte die Finanzierung des Neubaus von staatlichen Einrichtungen teilweise aus den Haushalten der örtlichen Staatsorgane und aus Krediten. Aus den Haushalten der örtlichen Staatsorgane wurden u. a. die Investitionsvorbereitung, Teile der Aufschließungsmaßnahmen und der Eigenmittelanteil für die Investitionsaufwendungen zum Bau von gesellschaftlichen Einrichtungen finanziert. Aus Krediten wurden auf der Grundlage des staatlichen Kreditplans die Aufwendungen für den Neubau gesellschaftlicher Einrichtungen bis zur Höhe der festgelegten staatlichen Aufwandsnormative abzüglich des Eigenmittelanteils finanziert. Die VEB Kommunale Wohnungsverwaltung bzw. VEB Gebäudewirtschaft waren zur Aufnahme der Investitionskredite bei der Bank ermächtigt. Die Filialen der Staatsbank als Kreditgeber schlossen mit den Kreditnehmern, in der Regel VEB Gebäudewirtschaft bzw. VEB Kommunale Wohnungsverwaltung, „Grundmittel-Kreditverträge“ ab. Diese Kreditverträge beinhalteten den Eigenmitteleinsatz, die Höhe des Kredits, die Höhe der Zinsen und der Tilgung sowie die objektkonkrete Zuordnung der Kredite. Die Kredite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wurden nach dem Annuitätsprinzip mit 5 % verzinst und getilgt (Zinssatz 4 %). Die Zins- und Tilgungsverpflichtungen wurden aus Mitteln des Staatshaushaltes erbracht.

6. Ist der Bundesregierung bekannt, daß nach der Staatshaushaltsordnung der DDR eine Kreditaufnahme durch die Gebietskörperschaften auf jeder Ebene – Bezirke, Kreise, Städte und Gemeinden – untersagt war?

Die Bundesregierung kann nicht bestätigen, daß nach dem Gesetz über die Staatshaushaltsordnung der DDR vom 4. Dezember 1968 (GBl. I 1968, S. 389) eine Kreditaufnahme durch die Gebietskörperschaften auf jeder Ebene untersagt war. Die genannte Vorschrift läßt im Gegenteil Kreditaufnahmen zur Durchführung von Rationalisierungsmaßnahmen ausdrücklich zu (§ 20) und untersagt Kreditaufnahmen für andere Zwecke an keiner anderen Stelle. Das wird auch durch die Verfahrensweise bei der Finanzierung des sogenannten komplexen Wohnungsbaus bestätigt.

7. Ist der Bundesregierung ferner bekannt, daß zwar der von der Volkskammer als Gesetz beschlossene Volkswirtschaftsplan sämtliche Investitionen auf dem Gebiet der DDR enthielt, deren Finanzierung im Staatshaushaltsplan enthalten war, aber die Aufnahme der als Finanzierungsmittel herangezogenen Kredite mit Beschluß eines Kreistages von den regionalen VEB „Gebäudewirtschaft“ erfolgte, für die den Banken aus dem Staatshaushalt Zins- und Tilgungsleistungen erbracht wurden?

Der mit der Frage unterstellte Sachverhalt ist unzutreffend. Tatsächlich waren durch die Kommunalen Wohnungsverwaltungen (auch VEB Gebäudewirtschaft genannt) für den komplexen Wohnungsbau, einschließlich der Finanzierung sozialer Einrichtungen, aufzunehmende Kredite durch die Kreistage bzw. Stadtverordnetenversammlungen zu beschließen, da es sich bei den o. g. Wohnungsverwaltungen um Regiebetriebe dieser Gebietskörperschaften handelte. Aufgrund der durch die niedrigen Mieten verursachten schlechten Liquiditätslage erhielten sie Subventionen für den Kapitaldienst aus den Haushalten der zuständigen Gebietskörperschaften.

Da nach der 5.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Gesetz über die Staatshaushaltsordnung Subventionen zweckgebunden waren, galt dieser Grundsatz auch für die Mittel zur Tilgung und Verzinsung von Wohnungsbaukrediten.

8. Wie beurteilt die Bundesregierung die in einem vom Gesamtverband der Wohnungswirtschaft in Auftrag gegebenen Rechtsgutachten aus dem Jahr 1991 enthaltene Feststellung, die zur Förderung des Wohnungsbaus in der ehemaligen DDR geschlossenen Kreditverträge stellten in Wahrheit keine materiell-rechtlichen Darlehens- und Kreditverträge dar, sondern allein staatliche Mechanismen zur Umverteilung und Kontrolle des Geldkreislaufs?

Die Bundesregierung teilt die in den genannten Gutachten vertretene Auffassung zur Rechtsnatur der Altschulden nicht. Die Altschulden der Wohnungswirtschaft im Beitrittsgebiet sind rechtsgültige Kreditverbindlichkeiten. Dies ergibt sich u. a. aus Artikel 232 § 1 EGBGB i. d. F. der Anlage 1 Kapitel III Sachgebiet B Abschnitt II Nr. 1 des Einigungsvertrages, wonach für Schuldverhältnisse, die vor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entstanden sind, grundsätzlich das Recht der ehemaligen DDR weiterhin maßgebend bleibt, soweit nicht Sondervorschriften eine Anpassung an die neuen Verhältnisse vorsehen. Artikel 22 Abs. 4 des Einigungsvertrages bestätigt ausdrücklich, daß mit den Wohnungen der ehemals staatlichen Wohnungswirtschaft, die vielfach ein beträchtliches Aktivvermögen darstellen, auch die betreffenden Schulden auf die Kommunen übergegangen sind.

9. Warum wurde die Frage der Altschulden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im Föderalen Konsolidierungsprogramm nicht abschließend geregelt?

Eine Regelung der Altverbindlichkeiten für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war im Rahmen des Solidarpaktes weder vorgesehen noch notwendig. Auch von Länderseite wurde die Lösung dieser Frage in den Solidarpaktgesprächen nicht verfolgt. Die jetzt erreichte Finanzausstattung von Ländern und Gemeinden ermöglicht es den Kommunen, den Kapitaldienst für die Altverbindlichkeiten auf gesellschaftliche Einrichtungen aus ihrem eigenen Haushalt zu finanzieren.

문서 번호 63

구동독채무상환기금법 개정법

1993 년 6 월 23 일

담당자 / 기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내용:

이 문서는 구동독채무상환기금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이 기금을 통해 1995 년에 신탁청과 채무청산기금 그리고 지자체의 주택회사의 구채무 일부를 연방정부의 특수자산으로 통합되었다. 1995 년 1 월 1 일에 이 기금이 설립되었을 당시 부채는 총 3360 억 마르크 (약 1717 억 9 천 유로)였다. 이 부채의 이자와 원금은 연방정부가 부담하였다. 이 기금의 설치는 연대협약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연방은행의 수입 중에서 35 억 유로를 상회하는 부분은 이 법의 6 조에 따라 이 기금으로 직접 흡수되었다. 나아가 부과가치세를 통해서만도 508 억 유로를 갚을 수 있었다.

구동독구채무상환기금의 독일어 표현은 Erblasttilgungsfond 이다. 이 명칭은 역사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독일어로 Erblast 라는 표현은 이 기금을 통해서 통일된 독일의 연방정부가 지는 부담은 연방정부의 정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라는 국가가 40 년 동안 존속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기금이 구채무를 상환하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래의 명칭이 갖는 의미를 상실하였지만, 이 명칭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수상이 구동독구채무상환은 종결되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정책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1000 억 유로를 더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30, S. 984-986, Ausgabetag 26.06.1993

(Artikel 37 des Gesetzes über 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finanziellen Erblast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zur langfristigen Sicherung des Aufbaus in den neuen Ländern, zur Neuordnung des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s und zur Entlast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 / Gesetz zur Umsetzung des Föderalen Konsolidierungsprogramms)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Erblastentilgungsfonds (Erblastentilgungsfonds-Gesetz - ELFG)

in der Fassung vom 16. August 1999 (BGBl. I S. 1882)

§ 1 Errichtung des Fonds

Es wird ein Fonds mit dem Namen "Erblastentilgungsfonds" (Fonds) als Sondervermögen des Bundes errichtet.

§ 2 Zweck des Fonds

(1) Der Fonds übernimmt ab 1. Januar 1995

1. die bis zu diesem Zeitpunkt aufgelaufenen Verbindlichkeiten des Kreditabwicklungsfonds aus

a) der bei Wirksamwerden des Beitritt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m 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 bestehenden Gesamtverschuldung des Republikhaushalts,

b) den Verbindlichkeiten aus der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nach Artikel 8 § 4 Abs. 6 der Anlage 1 zu dem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8. Mai 1990 (BGBl. 1990 II S. 518),

c) (weggefallen)

d) den Kosten der Abwicklung von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aus der Wahrnehmung staatlicher Aufgab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genüber dem Ausland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Artikel 24 Abs. 2 des Einigungsvertrages,

2. die Verbindlichkeiten des Kreditabwicklungsfonds aus der Ausgabe von Schuldverschreibungen, Schatzwechselln und aus der Aufnahme von Darlehen gegen Schuldschein,

3. die sich nach diesem Zeitpunkt ergebenden Schulden, Verbindlichkeiten, Verpflichtungen und Kosten nach Nummer 1.

(2) Der Fonds übernimmt ab 1. Januar 1995 als Mitschuldner die bis zum 31. Dezember 1994 aufgelaufenen Verbindlichkeiten der Treuhandanstalt aus aufgenommenen Krediten, übernommenen Altkrediten nach § 1 Abs. 1 Satz 2 und 3 des Treuhandkreditaufnahmegesetzes sowie aus Ausgleichsforderungen nach § 24 des D-Markbilanzgesetzes, § 6 Abs. 2 und 4 des Vermögensgesetzes und § 6 Abs. 2 der Unternehmensrückgabeverordnung. Im Innenverhältnis zur Treuhandanstalt ist der Fonds alleiniger Schuldner. § 4 des Treuhandkreditaufnahmegesetzes bleibt unberührt.

(3) Der Fonds übernimmt ab 1. Juli 1995 die ihm auf Grund der §§ 4 und 11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übertragenen Altverbindlichkeiten und die sich daraus ergebenden Verpflichtungen zur Zahlung von Zinsen und Tilgung. Der Fonds kann den Gläubigern die Einwendungen entgegenzusetzen, welche sich aus dem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Gläubiger und dem bisherigen Schuldner ergeben. Der Fonds kann die nach Satz 1 zu übernehmenden Verbindlichkeiten jederzeit unter Einhaltung einer Kündigungsfrist von einem Monat ganz oder teilweise kündigen. Der Fonds kann die Kündigung erstmals mit Wirkung zum 1. Juli 1995 aussprechen. Das Kündigungsrecht besteht auch gegenüber einem neuen Gläubiger, der die Forderung im Wege der Abtretung, kraft Gesetzes, oder auf andere Weise erworben hat oder erwerben wird. Die Zahlung von Vorfälligkeitsentschädigungen oder anderer entsprechender Kosten durch den Fonds ist ausgeschlossen. Privatisierungserlöse nach § 5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sind von dem Veräußerer oder Empfänger an den Fonds abzuführen. Der Begünstigte nach § 4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und sein Rechtsnachfolger haben den vom Fonds

übernommenen Teilentlastungsbetrag zuzüglich geleisteter Zinsen an den Fonds zu zahlen, wenn und soweit ein Bescheid nach § 4 Abs. 4 oder 7 oder § 5 Abs. 3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wirksam wird. Dem Fonds stehen auch die Zinsen nach § 4 Abs. 8 und § 5 Abs. 3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zu. Der Zinssatz bemißt sich nach der Höhe der Refinanzierungskosten des Bundes und wird vom Fonds festgelegt. Die Einnahmen des Fonds nach den Sätzen 7 bis 9 sind nach § 6 Abs. 2 zu verwenden. Der Fonds erstattet den Wohnungsunternehmen die in § 4 Abs. 4 Satz 4 Halbsatz 2 des Altschuldenhilfe-Gesetzes genannten Zinsen.

(4) Der Fonds übernimmt ab dem 1. Januar 1997 die in § 1 des Altschuldenregelungsgesetzes genannten Verbindlichkeiten und sonstigen Finanzierungsaufwendungen in, Höhe von zusammen 8 389 768 897,33 Deutsche Mark und die sich daraus ergebenden Verpflichtungen zur Zahlung von Zinsen und Tilgungen.

§ 3 Stellung im Rechtsverkehr, Verwaltung

(1) Der Fonds ist nicht rechtsfähig. Er kann unter seinem Namen im rechtsgeschäftlichen Verkehr handeln, klagen und verklagt werden. Der allgemeine Gerichtsstand des Fonds ist der Sitz der Bundesregierung.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verwaltet den Fonds.

(2) Die Schulden des Fonds werden nach den für die Verwaltung der allgemeinen Bundesschuld jeweils geltenden Grundsätzen durch die Bundesschuldenverwaltung verwaltet.

§ 4 Bundeshaftung

(1) Der Bund haftet unbeschadet seiner Schuldmitübernahme nach § 1 Abs. 1 des Schuldenmitübernahmegesetzes vom 21. Juni 1999 (BGBl. I S. 1384) für die Verbindlichkeiten des Fonds. Soweit der Fonds seine Verpflichtungen nicht durch eigene Einnahmen erfüllen kann, werden die Zahlungen aus dem Bundeshaushalt geleistet.

(2) Der Fonds ist ein Sondervermögen im Sinne von Artikel 110 Abs. 1 des Grundgesetzes.

(3) Der Bund ist berechtigt, Ausgleichsforderungen oder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umgewandelte Ausgleichsforderungen des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ufzukaufen.

(4) Die Schuldurkunden des Fonds stehen den Schuldurkunden des Bundes gleich.

§ 5

(weggefallen)

§ 6 Zuführungen des Bundes

(1) Der Fonds erhält aus dem Bundeshaushalt mit Wirkung vom 1. Januar 1999 jährlich die folgenden Mittel:

1. Zuführungen in Höhe der Einnahmen aus dem Bundesbankgewinn, die einen Betrag von 7 Milliarden Deutsche Mark übersteigen;

2. Zuführungen in Höhe der von den Ländern nach § 3 des Altschuldenregelungsgesetzes vom 6. März 1997 (BGBl. I S. 434) geleisteten Erstattungsbeiträge,

Die Zuführungen sind zur Tilgung seiner im jeweiligen Jahr fällig werdenden Verbindlichkeiten zu verwenden. Für Verpflichtungen nach § 2 Abs. 1 Nr. 1 Buchstabe d dürfen die Einnahmen nicht verwendet werden.

(2) Die dem Fonds in einem Jahr verbleibende Liquidität ist im jeweiligen Jahr an den

Bundeshaushalt abzuführen.

§ 7 Wirtschaftsplan

Für den Fonds wird ab 1. Januar 1995 für jedes Wirtschaftsjahr ein Wirtschaftsplan erstellt, in dem Einnahmen und Ausgaben darzustellen sind.

§ 8 Jahresrechnung

(1)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stellt am Schluß eines jeden Wirtschaftsjahres die Jahresrechnung für den Fonds auf und fügt sie als Anhang der Haushaltsrechnung des Bundes bei.

(2) In der Jahresrechnung sind der Bestand des Sondervermögens einschließlich der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sowie die Einnahmen und Ausgaben nachzuweisen.

§ 9 Verwaltungskosten

Die Kosten für die Verwaltung des Fonds trägt der Bund.

§ 10 Gleichstellung mit Bundesbehörden

Auf die Verpflichtungen des Fonds, Abgaben auf Grund von Bundesgesetzen an den Bund, die Länder, die Gemeinden (Gemeindeverbände) und 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zu entrichten, finden die allgemein für Bundesbehörden geltenden Vorschriften Anwendung.

§ 11 Auflösung des Fonds

Der Fonds wird nach Tilgung seiner Verbindlichkeiten durch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aufgelöst. Die Auflösung ist im Bundesanzeiger bekanntzumachen.

§ 12 Überleitungsvorschriften

(1) Der Kreditabwicklungsfonds wird abweichend von den in Artikel 23 Abs. 5 sowie Artikel 24 Abs. 2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Fristen und abweichend von den in den §§ 11 und 12 des Gesetzes über die Errichtung eines Fonds "Kreditabwicklungsfonds" genannten Fristen bis zum 31. Dezember 1994 verlängert. Der Kreditabwicklungsfonds wird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4 aufgelöst und mit seinen Verbindlichkeiten und Forderungen in den Erblastentilgungsfonds nach § 1 überführt. Der Erblastentilgungsfonds wird Rechtsnachfolger des Kreditabwicklungsfonds.

(2) Abweichend von Artikel 27 Abs. 3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wie Artikel 34 des Gesetzes zu dem Vertrag vom 18. Mai 1990 und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5. Juni 1990 (BGBl. 1990 II S. 518), Artikel 23 Abs. 4 und Artikel 24 Abs. 2 des Einigungsvertrages und § 11 des Gesetzes über die Errichtung eines Fonds "Kreditabwicklungsfonds" werden die dort bezeichneten Verbindlichkeiten vom Erblastentilgungsfonds nach § 1 übernommen.

(3) Abweichend von Artikel 23 Abs. 3 des Einigungsvertrages erstatten Bund und Treuhandanstalt bis zum 31. Dezember 1994 jeweils die Hälfte der vom Kreditabwicklungsfonds erbrachten Zinsleistungen. Zu diesem Zweck aufzunehmende Kredite der Treuhandanstalt sind nicht auf den Kreditrahmen nach § 1 Abs. 1 Satz 1 des Treuhandkreditaufnahmegesetzes anzurechnen.

(4)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4 ist das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Fonds

"Kreditabwicklungsfonds" nicht mehr anzuwenden.

(5) Der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hat eingehende Rückzahlungen bis zum 31. Dezember 1994 an den Kreditabwicklungsfonds und ab 1. Januar 1995 an den Erblastentilgungsfonds nach § 1 abzuführen.

(6) Im Falle der Liquidation oder des Verkaufs von Außenhandelsbetrieben ist der nach Erfüllung aller Verbindlichkeiten verbleibende Liquidations- oder Verkaufserlös bis zum 31. Dezember 1994 an den Kreditabwicklungsfonds und ab dem 1. Januar 1995 an den Erblastentilgungsfonds (§ 1) abzuführen.

Rechtlicher Hinweis: Die bereitgestellten Information und Gesetze auf dieser Webseite können veraltet oder fehlerhaft sein. Für Vollständigkeit und Richtigkeit übernehmen wir keinerlei Garantie.

문서 번호 64

동서독 화폐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규정

1993 년 8 월 24 일

담당자 / 기관: Bundesamt für Finanzen, Bundeskanzler Helmut Kohl,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Bundesamt für Finanzen

내용:

이 문서는 독일연방정부가 통일 이후에 실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서독 화폐교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처리 사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마르크를 도이치마르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악용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화폐교환 전 1990년 6월 29일에 동독 정부가 화폐교환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법을 도입하였고, 그 법은 통일조약을 통해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으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 법에 따라 동독 재무부에 „화폐전환감사국“이 설치되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이 부서는 연방재무부에 소속되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반환요청을 금융기관에서 주관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업무였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제법과 일반행정법의 통화규정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일반 시중은행이 처리하게 하는 것은 무리였다.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그리고 전문성면에서도 시중 금융기관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미 베를린에 외청을 설치한 연방재정청으로 이관되었다. 이 부처는 연방재무부에 속하는 기관이다. 감사국에 근무하는 33명의 직원은 연방재정청의 직원으로 신분이 변화한다. 이 부서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약 5백 4십만 마르크의 인건비는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이 법률에 의해 감사절차가 확대됨으로 인해 약 천만 마르크까지 감사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환수받은 금액은 화폐전환균형기금으로 처리된다. 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 법은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법의 기준을 준수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47, S. 1522-1524, Ausgabetag 04.09.1993

Gesetz
gegen rechtswidrige Handlungen bei der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Vom 24. August 1993

Der Bundestag hat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Artikel 1
Gesetz
zur Regelung der Folgen
rechtswidriger Handlungen
bei der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Währungsumstellungsgesetz – WUFG)

§ 1

(1) Die 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 wird in das Bundesamt für Finanzen eingegliedert, das ihre Aufgaben und Befugnisse übernimmt. Das Bundesamt für Finanzen unterhält zur Erfüllung der Aufgaben aus diesem Gesetz eine Außenstelle in Berlin.

(2) Die Zuständigkeit für Rücknahme- und Rückforderungsverfahren geht auf das Bundesamt für Finanzen über. Dies gilt auch für Verfahren, die i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s Gesetzes anhängig sind.

§ 2

(1) Soweit anlässlich der Währungsumstellung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rechtswidrig in Deutsche Mark umgestellt worden sind, hat das Bundesamt für Finanzen die Umstellung zurückzunehmen, einen neuen Umstellungsbescheid zu erlassen und die rechtswidrig umgestellten Beträge in voller Höhe zurückzufordern. Die Rücknahme wirkt auf den Zeitpunkt der rechtswidrigen Umstellung zurück. Stand dem Kontoinhaber das Guthaben nicht zu oder wurde es durch Einzahlung von auf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autenden Banknoten oder Münzen begründet, die unter Verstoß gegen die Devisen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en Gebiet eingeführt oder erworben wurden, ist der Gesamtbetrag rechtswidrig umgestellt worden.

(2) Stand das umgestellte Guthaben einem anderen als dem Kontoinhaber oder dem Verfügungsberechtigten zu, ist der Rücknahme- und Rückforderungsbescheid auch gegen diesen anderen als weiteren Beteiligten zu richten. Den Beteiligten obliegt der Nachweis der den Anspruch auf Währungsumstellung begründenden Tatsachen. Sie haften für den öffentlich-rechtlichen Erstattungsanspruch als Gesamtschuldner. Bei juristischen Personen haften auch deren handelnde Organe, soweit diese die Umstände, die die Rechtswidrigkeit des Umstellungsbescheides be-

gründet haben, gekannt oder infolge grober Fahrlässigkeit nicht gekannt haben.

(3) Das Bundesamt für Finanzen kann auf Antrag den Rückgewähranspruch ganz oder zum Teil erlassen, wenn dessen Geltendmachung nach Lage des einzelnen Falles unbillig wäre. Unbillig ist die Geltendmachung insbesondere dann, wenn der Antragsteller nachweist, daß er die Rechtswidrigkeit der Umstellung weder erkannt hat noch hätte erkennen können und die Geltendmachung zu einer unzumutbaren Härte führen würde.

(4) Die Rücknahme ist nur innerhalb von fünf Jahren seit dem Zeitpunkt zulässig, in dem das Bundesamt für Finanzen von der Rechtswidrigkeit der den ursprünglichen Umstellungsbescheid begründenden Tatsachen vollständig Kenntnis erlangt hat. Fristen, die bereits vor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abgelaufen sind, bleiben unberührt. Der Anspruch auf Rückgewähr rechtswidrig umgestellter Beträge einschließlich deren Verzinsung verjährt am 31. Dezember 2003. Die Geldinstitute sind verpflichtet, die Umstellungsanträge sowie die Buchungsbelege aus dem Jahre 1990 bis zu diesem Zeitpunkt im Original aufzubewahren.

§ 3

Die zurückzufordernden Beträge sind ab dem Zeitpunkt der rechtswidrigen Umstellung nach dem jeweils geltenden Zinssatz für Ausgleichsforderungen im Sinne der Anlage I Artikel 8 § 4 Abs. 1 des Staatsvertrages vom 18. Mai 1990 (BGBl. 1990 II S. 518, 550) zu verzinsen.

§ 4

Die zurückzufordernden Beträge einschließlich der Zinsen sind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zu zahlen.

§ 5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gegen Maßnahmen nach § 2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 6

Für alle Streitigkeiten nach diesem Gesetz ist das Verwaltungsgericht örtlich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ie Außenstelle des Bundesamtes für Finanzen (§ 1 Abs. 1 Satz 2) ihren Sitz hat.

§ 7

Soweit Personen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tätig werden, dürfen sie die ihnen bei ihrer Tätigkeit bekannt gewordenen Tatsachen nicht unbefugt offenbaren, verarbeiten oder nutzen.

Artikel 2

**Änderung des Gesetzes
zur Feststellung von rechtswidrigen Handlungen
mit Wirkung auf die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Das Gesetz zur Feststellung von rechtswidrigen Handlungen mit Wirkung auf die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vom 29. Juni 1990 (GBl. I Nr. 38 S. 501), das nach Anlage II Kapitel IV Abschnitt I Nr. 4 des Einigungsvertrages vom 31. August 1990 in Verbindung mit Artikel 1 des Gesetzes vom 23. September 1990 (BGBl. 1990 II S. 885, 1194) fortgilt, wird wie folgt geändert:

1. § 3 wird wie folgt geändert:
 - a) In Absatz 3 Satz 3 werden die Worte „stellen fest“ durch die Worte „sind verpflichtet festzustellen“ und die Angabe „30. 6. 1990“ durch die Worte „Tag der Umstellung“ ersetzt.
 - b) Absatz 3 Satz 4 wird wie folgt gefaßt:

„Sofern eine solche Erhöhung vorliegt, sind die Geldinstitute verpflichtet, der Prüfbehörde unverzüglich die einschlägigen Daten mitzuteilen.“
 - c) Absatz 4 wird wie folgt gefaßt:

„(4) Die Geldinstitute sind verpflichtet, der Prüfbehörde Einsichtnahme in Kontounterlagen von juristischen Personen oder Stellen mit Sitz oder Niederlass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 gewähren,

 1. die Konten nach dem 1. Januar 1990 neu eingerichtet haben, wenn das Guthaben am Tage der Umstellung mindestens 2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ägt, oder
 2. deren Kontenguthaben sich zwischen dem 1. Januar 1990 und dem Tag der Umstellung um mindestens 20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höht oder vermindert haben.“
 - d) Absatz 6 wird wie folgt gefaßt:

„(6) Die zur Vorbereitung der Prüfung gemäß § 1 festgestellten Daten dürfen nur für Zwecke verarbeitet oder genutzt werden, für die sie gespeichert worden sind. Soweit sie nicht an die Prüfbehörde mitzuteilen sind, sind sie unverzüglich, die festgestellten Daten der übrigen Kontoinhaber spätestens nach Übermittlung an die Prüfbehörde zu löschen oder zu vernichten.“
2. § 4 wird wie folgt geändert:
 - a) Absatz 1 Satz 1 erhält folgende Fassung:

„Die Prüfbehörde nimmt die erforderlichen Prüfungen vor.“
 - b) In Absatz 1 Satz 2 werden nach dem Wort „Kontoinhaber“ die Worte „zu seinem Guthaben“ gestrichen.
 - c) In Absatz 1 Satz 3 werden die Worte „4 Wochen“ durch die Worte „3 Monaten“ ersetzt.
 - d) Absatz 1 Satz 4 wird wie folgt gefaßt:

„Ergeben die Prüfunge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für den Verdacht einer Straftat, hat sie Anzeige bei der zuständigen Strafverfolgungsbehörde zu erstatten.“
 - e) Absatz 3 wird wie folgt gefaßt:

„(3) Die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von der Prüfbehörde erhobenen, ihr übermittelten oder sonst bekannt gewordenen Daten dürfen nur für Zwecke dieses Gesetzes und des Währungsumstellungsfolgesgesetzes verarbeitet oder genutzt werden. Sie sind zu löschen, soweit sie zur Aufgabenerfüllung nicht mehr erforderlich sind, spätestens mit Auflösung der Behörde; Daten in Akten sind zu sperren, wenn ohne die Sperrung schutzwürdige Interessen des Betroffenen einschließlich juristischer Personen oder Stellen beeinträchtigt würden und die Daten für die Aufgabenerfüllung der Behörde nicht mehr erforderlich sind.“
3. § 5 Abs. 1 wird wie folgt geändert:
 - a) Satz 1 Nr. 1 wird wie folgt gefaßt:

„1. Konten juristischer Personen mit Sitz oder Niederlassung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nn

 - a) das Guthaben mindestens 2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ägt, sofern sich das Guthaben zwischen dem 1. Januar 1990 und dem Tag der Umstellung um mindestens 20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höht hat, oder
 - b) das Guthaben weniger als 25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ägt und Guthabenabgänge zwischen dem 1. Januar 1990 und dem Tag der Umstellung mehr als 200 000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agen, wobei dies auch für Konten gilt, die vor dem 1. Juli 1990 aufgelöst wurden, und“.
 - b) In Satz 1 Nr. 2 wird das Wort „Umstellungsanträge“ durch das Wort „Konten“, die Angabe „per 30. 6. 1990“ durch die Worte „am Tag der Umstellung“ und die Angabe „30. 6. 1990“ durch die Worte „Tag der Umstellung“ ersetzt.
 - c) Satz 2 wird wie folgt gefaßt:

„Die Geldinstitute sind verpflichtet, die Prüfbehörde unverzüglich über die Konten, für die die in Satz 1 genannten Kriterien zutreffen, zu informieren.“
4. § 6 wird wie folgt geändert:

In Absatz 1 wird nach Satz 1 folgender Satz 2 angefügt:

„Die Befugnis der Prüfbehörde gemäß Satz 1 umfaßt auch die Prüfung der Kontenbewegungen nach der Umstellung und die in fremder Währung geführten Konten.“

5. § 7 wird wie folgt gefaßt:

„§ 7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1. entgegen § 3 Abs. 3 Satz 3 eine entsprechende Erhöhung des Gesamtguthabens einer Person nicht feststellt,
2. entgegen § 3 Abs. 3 Satz 4 die einschlägigen Daten der Prüfbehörde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mitteilt,
3. entgegen § 3 Abs. 4 oder § 5 Abs. 1 Satz 1 der Prüfbehörde Einsicht nicht gewährt oder
4. entgegen § 5 Abs. 1 Satz 2 die Prüfbehörde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informiert.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r Geldbuße bis zu hunderttausend Deutsche Mark geahndet werden.

(3) Verwaltungsbehörde im Sinne des § 36 Abs. 1 Nr. 1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ist das Bundesamt für Finanzen.“

6. § 8 wird wie folgt gefaßt:

„§ 8

Soweit Personen zur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tätig werden, dürfen sie die ihnen bei ihrer Tätigkeit bekanntgewordenen Tatsachen nicht unbefugt offenbaren, verarbeiten oder nutzen.“

Artikel 3

Inkrafttreten

Dieses Gesetz tritt am Tage nach der Verkündung in Kraft.

Die verfassungsmäßigen Rechte des Bundesrates sind gewahrt.

Das vorstehende Gesetz wird hiermit ausgefertigt und wird im Bundesgesetzblatt verkündet.

Bonn, den 24. August 1993

Der Bundespräsident
Weizsäcker

Für den Bundeskanzler
Die Bundesministerin
für Raumordnung, Bauwesen und Städtebau
I. Schwaetzer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Theo Waigel

화폐 전환 이후 독일의 화폐와 통화

1994 년

담당자 / 기관: 라인하르트 폴

내용:

이 문서는 독일정부출연 경제연구기관인 독일경제연구소 (DIW)에서 화폐통합의 결과에 관해 작성한 분석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서독과 계획경제가 주도하는 동독의 화폐가 서로 통합된 것은 유례가 드문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 전환이 최적의 양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마련하는 준비는 대단히 어려웠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합의한 화폐 전환 비율은 안정성, 경쟁력, 예산 및 사회정책을 고려한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점을 찾은 일종의 합의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독의 구(舊) 부채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처리규정이나 동독 고정자산에 대한 주민의 배분비율이 불충분한 수준이었던 점 등은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었다.

이와 반대로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 절하 및 자본시장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 등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폐 통합 및 정치 통합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들을 극복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화폐 관련 변수와 실질적 변수 사이에 성립된 관계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잠재적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화폐량 정책의 적용을 어렵게 했고, 특히 적절한 화폐량 책정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난관으로 작용했다.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진행한 화폐량 책정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연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 놓은 화폐량 목표는 그 운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설정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화폐량의 변동 양상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비록 1991 년 및 1992 년의 기간 동안에는 서독에서 현격한 속도로 물가인상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는 팽창적인 화폐 정책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방은행이 이러한 진행 상황을 전담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1 년 및 1992 년 기간 동안 나타난 서독의 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급격하게 불러오게 되었고, 아울러 물가 인상의 압박 역시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결국은 소득의 규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과 경기침체의 가능성 또한 더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은행에서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경제 상황에 너무 늦게 대응했으며, 충분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다.

출처: 독일 연방은행, DIW 베를린

Geld und Wahrung in Deutschland seit der Wahrungsumstellung

von Reinhard Pohl

1. Die Ausgangsdebatte: Grundsteintheorie contra Kronungstheorie

Nach dem Zusammenbruch der Mauer glaubte zunachst kaum jemand an eine baldige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Herrschende Meinung war, die DDR werde den Weg aus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bis auf weiteres zwar mit westdeutscher Unterstutzung, aber letztlich selbstandig gehen mussen. Hierzu wurden in Westdeutschland zahlreiche Stufenplane entwickelt. Sie waren uberwiegend von der sogenannten Kronungstheorie gepragt: Eine deutsch-deutsche Wahrungunion durfe erst am Ende des Prozesses der Anpassung der DDR an die marktwirtschaftlichen Verhaltnisse in Westdeutschland stehen. Bis dahin musse dieser Proze von einem mehr oder weniger variablen Wechselkurs der Mark der DDR (M) — kurz: Mark oder Ost-Mark — gegenuber der D-Mark (DM) — und damit auch anderen Wahrungen — flankiert werden. Nur wenige Politiker und Wissenschaftler schwammen damals gegen den Strom. Ihre okonomischen Argumente stammten vor allem aus dem Arsenal der sogenannten Grundsteintheorie; ihr zufolge sind eine gemeinsame Wahrung und eine gemeinsame Geldpolitik die Basis eines Integrationsprozesses und sollten deshalb an dessen Anfang stehen.

Alle Stufenplane wurden schlagartig zu Makulatur, als am 7. Februar 1990 Bundeskanzler Kohl der Regierung der DDR eine Wa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anbot. Die Union sollte primar als Vorreiter einer politischen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dienen; von den Vertretern der Grundsteintheorie wurde sie aber auch in konomischer Hinsicht begrut. Einige Ihrer Argumente waren durchaus plausibel:

Eine Wa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beschleunigt in der DDR die Schaffung jenes Rechtssystems und jener Institutionen, die eine wesentliche Voraussetzung fur einen zugigen Aufbau der ostdeutschen Wirtschaft sind.

Die D-Mark gehort zu den attraktivsten Wahrungen der Welt. Fur ein solches Geld lohnt es sich fur die Burger der DDR, im Lande zu bleiben und sich dort zu engagieren. Kapitalimporte werden insoweit stimuliert, als west-

deutsche und auslandische Investoren bei der Anlage in D-Mark — anders als bei der einer Ost-Mark-Anlage — kein Wahrungsrisiko eingehen. In zweifacher Hinsicht hatte die Ost-Mark einen gewaltigen Startnachteil. Sie war fur die Burger der DDR das Symbol einer desolaten Wirtschaft, und die Staatsbank der DDR als ausfuhrendes Organ der Planbehorden besa naturgema noch keinerlei geld- und wahrungspolitische Erfahrungen mit einer Marktwirtschaft.

Wie steht es aber mit dem zentralen Argument der Grundsteintheorie? Ihm zufolge hat eine gemeinsame, stabile Wahrung einen integrationsfordernden Effekt, da sie auf die am Wirtschaftsprozess Beteiligten disziplinierend wirke. Hierin steckt ein wahrer Kern, wie sich an einem einfachen Beispiel zeigen lat: Ein Wahrungsgebiet A, in dem bei relativ hohen Pro-Kopf-Einkommen eine auf Stabilitat der Kosten- und Preisniveaus ausgerichtete Lohn- und Geldpolitik verfolgt wird, vereinbart eine Wahrungunion mit einem kleinen Wahrungsgebiet B, in dem die Produktivitat und die Reallohne niedrig sind und eine von der Notenbank alimentierte, kosten- und prelstreibende Lohnpolitik betrieben wird. Die Rate der Wahrungsumstellung wird so gewahlt, da das Kosten- und Preisniveau in B etwa so hoch ist wie in A. Danach beginnt ein Anpassungsprozess. Sind die Arbeitskrafte hoch mobil, werden massive Wanderungen von Arbeitskraften aus B nach A dazu fuhren, da sich die Lohnkosten- und Preisniveaus sowie die Arbeitslosenraten bald einander anzunahern. Was geschieht jedoch bei geringer Mobilitat der Arbeitskrafte? Was geschieht, wenn die Gewerkschaften in B versuchen, durch starke Lohnerhohungen den Aufholprozess bei den Reallohnen zu forcieren? Die schlichte grundsteintheoretische Antwort lautet: Da die gemeinsame, auf Preisstabilitat ausgerichtete Notenbank die uberwalzung der stark steigenden Lohnstuckkosten auf die Absatzpreise nicht zulat, wird es in der Region B Verluste, Bankrotte und vermehrte Arbeitslosigkeit geben. Dies wird die wirtschaftlichen Akteure zu einer Kurskorrektur zwingen. Die Unternehmen werden sich um Produktivitatssteigerung bemuhren, und die Tarifparteien werden nur noch solche Lohnerhohungen vereinbaren, die dem voraussichtlichen Produktivitatsfortschritt entsprechen.

An dieser Stelle hakten die Kritiker ein: Ihrer Auffassung nach waren es die Anwendungsbedingungen der Grundsteintheorie, die im Falle der deutschen Währungsunion nicht erfüllt waren. Eine Währungsunion kann ihre disziplinierenden Wirkungen nur entfalten, wenn Unternehmen und Arbeitnehmer vor den Folgen eines geschäfts- und lohnpolitischen Fehlverhaltens nicht durch Transferzahlungen der „reichen“ Region der Union geschützt werden, sondern selber dafür einstehen müssen. Doch das, was am 1. Juli 1990 in Kraft trat, war nicht bloß eine Währungsunion, auch nicht eine reine Wirtschaftsunion, sondern auch und nicht zuletzt eine Sozialunion. Mit diesem Vorgriff auf eine politische Union wurde in der DDR der Anspruch auf eine rasche Angleichung der ostdeutschen an die westdeutschen Lebensverhältnisse, sprich Realeinkommen, geweckt — ein Anspruch, der Anfang 1991 in Stufenpläne mündete, mit denen eine rasche Annäherung der ostdeutschen an die westdeutschen Nominallöhne durchgesetzt werden sollte. Die daraus resultierende Gefahr eines Zusammenbruchs der ostdeutschen Wirtschaft war es, auf die schon Mitte Februar 1990 der Präsident des DIW, Lutz Hoffmann, mit der Warnung vor einer gesamtdeutschen Arbeitslosigkeit von 4 1/2 bis 5 Millionen und im März 1991 der damalige Präsident der Deutschen Bundesbank, Karl-Otto Pöhl, mit dem Wort „disaster“ aufmerksam machen wollten¹.

Die Öffentlichkeit freilich sah die größten Gefahren zunächst weniger in der „Güterwirtschaft“ als vielmehr im Bereich der Geld- und Währungspolitik. In der Diskussion dominierten Begriffe wie Geldüberhang, Übernachfrage, Zahlungsbilanzdefizite, Inflation, Abwertung der D-Mark und Kapitalzinssteigerung. Symptomatisch ist, daß kurz nach der Ankündigung einer Währungsunion der deutsche Anleihezins um mehr als einen Prozentpunkt anzog.

Die führenden westdeutschen Wirtschaftsforschungsinstitute, nicht zuletzt das DIW, haben von Anfang an die aus einem lohnpolitischen Fehlverhalten resultierenden Gefahren für die Produktion und die Beschäftigung in Ostdeutschland für sehr groß gehalten. Sie plädierten deshalb für eine Lohnpolitik, die sich an dem beim jeweiligen Stand der Beschäftigung zu erwartenden Produktivitätsfortschritt ausrichtet².

Die Institute übersahen keineswegs die Gefahren für den Sektor „Geld und Währungen“. Sie vermuteten aber, daß diese Probleme eher zu bewältigen seien als die Probleme im Bereich von Produktion und Beschäftigung. Inwieweit diese relativ optimistische Einschätzung zutrifft, läßt sich zeigen, wenn man die Probleme der Währungsumstellung (Abschnitt 2) und die Probleme der „laufenden“ Geld- und Währungspolitik (Abschnitt 3) Revue passieren läßt.

2. Währungsumstellung

Nehmen wir einmal an, zwei marktwirtschaftlich ausgerichtete Länder beabsichtigten, sich zu einer Währungsunion zusammenzuschließen. Es besteht — so sei unter-

stellt — zwischen ihnen ein Gefälle der Pro-Kopf-Einkommen. Trotzdem kann das Vorhaben problemlos verwirklicht werden, wenn die „Konvergenzbedingungen“ erfüllt sind: In beiden Ländern sind seit längerem die ihre gemeinsame Grenze überschreitenden Bewegungen von Waren, Diensten, Kapital und Arbeitskräften gesetzlich nicht beschränkt, der Wechselkurs zwischen beiden Währungen ist anhaltend stabil, und diese Stabilität beruht primär darauf, daß das Kosten- und Preisniveau des einen Landes über den Wechselkurs gerechnet auf längere Sicht ungefähr so hoch war wie im Partnerland. Unter diesen Voraussetzungen, wie sie zum Beispiel im Verhältnis Deutschlands zu Österreich oder den Niederlanden gegeben sind, ist der Wechselkurs im „Gleichgewicht“, also identisch mit der optimalen Rate der Währungskonversion. Zu ihr können alle finanziellen Bestände (Aktiva und Passiva, in erster Linie Bargeld,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friktionlos konvertiert werden. Dies gilt auch für alle Stromgrößen, soweit sie aus Verträgen stammen, die über den Zeitpunkt der Währungskonversion hinaus reichen, also vor allem Zinsen, Löhne und Gehälter, Renten und Pensionen, Warenlieferungen, Dienstleistungen, Abgaben an den Staat. Nach dieser Konversion werden — dies ist erfreulich — die Kosten des Währungsumtausches wegfallen, und man muß sich — dies ist eher lästig — in technischer und mentaler Hinsicht auf das neue Geld und die neuen Preise einstellen; doch im übrigen bleibt alles beim alten. Es gibt keine Verschiebungen von Vermögen, und die gegenseitige Wettbewerbsposition beider Länder bleibt völlig unberührt.

Diese Konvergenzkriterien waren nicht bei der deutschen Währungsunion erfüllt, also einer Währungsunion, an der ein Land mit einer zentralen Planwirtschaft beteiligt wurde. Da die Suche nach der optimalen Konversionsrate nicht — wie in den ursprünglichen Stufenplänen vorgesehen — dem Markt überlassen werden konnte, mußten die Vertreter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die Rate (oder die Raten) sowie die sonstigen Modalitäten der Währungskonversion auf administrativen Wegen finden.

Die vereinbarten Modalitäten waren ein Kompromiß, mit dem man vielen Wünschen und Postulaten Rechnung tragen wollte. Wie ist dieser Kompromiß zustande gekommen? Um dies nachzuvollziehen, sollte man sich die wesentlichen der damals präsentierten Vorschläge zur Konversion der Bestände (Abschnitt 2.1) und der Stromgrößen (Abschnitt 2.2) vor Augen führen. Die effektiven Modalitäten, seinerzeit ausführlich publiziert, brauchen hier nur in komprimierter Form in Erinnerung gerufen zu werden.

¹ Hoffmann (1990) und Pöhl (1991)

² Vgl. Gemeinschaftsdiagnose (1990b), S. 625.

Tabelle 1

Szenarien der Währungsumstellung
Umstellung von Mark der DDR (M) auf Deutsche Mark
(D-Mark oder DM)

Aktiva und Passiva	Bestand Mrd. M bzw. DM	Verzinsung	
		% p.a.	Mrd.DM
Ausgangssituation des DDR-Bankensystems vor der Währungsumstellung, in Mrd. Mark der DDR (M)			
Kredite an die Wirtschaft	350		
+ Übrige Forderungen und Aktiva	150		
= Summe aller Aktiva	500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lte	180		
+ Geldbestände von Wirtschaft und Staat	120		
= Geldbestände inländischer Nichtbanken	300		
+ Übrige Passiva	200		
= Summe aller Passiva	500		
Szenario 1: Symmetrische Umstellung der Aktiva und Passiva			
Kredite an die Wirtschaft	140	8	11,2
+ Übrige Forderungen und Aktiva	60	8	4,8
= Summe aller Aktiva	200	8	16,0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lte	72	6	4,3
+ Geldbestände von Wirtschaft und Staat	48	6	2,9
= Geldbestände inländischer Nichtbanken	120	6	7,2
+ Übrige Passiva	80	6	4,8
= Summe aller Passiva	200	6	12,0
Szenario 2: Bevorzugung der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lte			
Kredite an die Wirtschaft	140	8	11,2
+ Übrige Forderungen und Aktiva	60	8	4,8
= Zwischensumme	200	8	16,0
+ Ausgleichsforderungen an den Staat	108	8	8,6
= Summe aller Aktiva	308	8	24,6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lte	180	6	10,8
+ Geldbestände von Wirtschaft und Staat	48	6	2,9
= Geldbestände inländischer Nichtbanken	228	6	13,7
+ Übrige Passiva	80	6	4,8
= Summe aller Passiva	308	6	18,5
Szenario 3: Wie Szenario 2 und überdies Streichung der Kredite an die Wirtschaft			
Kredite an die Wirtschaft	0	-	-
+ Übrige Forderungen und Aktiva	60	8	4,8
= Zwischensumme	60	8	4,8
+ Ausgleichsforderungen an den Staat	248	8	19,8
= Summe aller Aktiva	308	8	24,6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lte	180	6	10,8
+ Geldbestände von Wirtschaft und Staat	48	6	2,9
= Geldbestände inländischer Nichtbanken	228	6	13,7
+ Übrige Passiva	80	6	4,8
= Summe aller Passiva	308	6	18,5
Szenario 4: Tatsächliche Währungsumstellung			
Kredite an die Wirtschaft	176	8	14,1
+ Übrige Forderungen und Aktiva	67	8	5,4
= Zwischensumme	243	8	19,5
+ Ausgleichsforderungen an den Staat	26	8	2,0
= Summe aller Aktiva	269	8	21,5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lte	122	6	7,3
+ Geldbestände von Wirtschaft und Staat	59	6	3,5
= Geldbestände inländischer Nichtbanken	181	6	10,8
+ Übrige Passiva	88	6	5,3
= Summe aller Passiva	269	6	18,1

2.1 Konversion der finanziellen Bestände

Kurz vor der Währungsumstellung hatte das Bankensystem der DDR Aktiva und Passiva von jeweils fast 500 Mrd. M (vgl. Tabelle 1); sie enthält die zusammengefaßten und stark gerundeten Ergebnisse der Tabelle 2. Der wichtigste Posten der Aktiva waren mit 350 Mrd. M die Kredite an die Wirtschaft (Unternehmen und Wohnungswirtschaft). Den größten Anteil an den Passiva hatten mit fast 300 Mrd. M die Geldbestände der inländischen Nichtbanken, das heißt der privaten Haushalte (120 Mrd. M) sowie der Unternehmen und des Staates (zusammen rund 180 Mrd. M). Weniger Gewicht hatten die Auslandspositionen in konvertibler Währung. In D-Mark bewertet betragen die Forderungen an das Ausland 28 Mrd und die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Ausland 56 Mrd.

An die Währungsumstellung wurden oft hohe und einander widersprechende Anforderungen gestellt. Diese Erwartungen sind in drei alternativen Szenarios (vgl. Tabelle 1) eingefangen worden:

- Das erste Szenario entspricht zwei Postulaten: Zum einen sollen die Rentabilität und die Solvenz des Bankensystems ohne Belastung des Steuerzahlers gesichert werden. Zum anderen darf die Geldmenge im Währungsgebiet der D-Mark durch die auf D-Mark umgestellten Geldbestände in der DDR nicht so stark ausgeweitet werden, daß die Geldwertstabilität in Deutschland bedroht wird.
- Mit der Verwirklichung des zweiten Szenarios sollten gegebenenfalls die privaten Sparer bevorzugt werden.
- Das dritte Szenario kommt der Forderung entgegen, die Schulden der Unternehmen pauschal zu streichen.

Im *ersten* Szenario sind die Aktiva und Passiva des Bankensystems im selben Verhältnis umgestellt worden, in diesem Beispiel von 500 Mrd. M auf 200 Mrd. DM, also im Verhältnis 2,5 M zu 1 DM (allerdings weicht die Umstellung einiger der „übrigen“ Aktiva und Passiva von dieser durchschnittlichen Rate ab). Für die auf D-Mark umgestellten Aktiva wurde eine durchschnittliche Verzinsung von 8% p.a. als realistisch angesehen, und für die Passiva wurde eine Verzinsung von 6% p.a. angenommen.

Dieses Szenario einer symmetrischen Umstellung wird dem Postulat der Sicherung der Rentabilität insoweit gerecht, als für das Bankensystem ein Zinsüberschuß ausgewiesen wird, mit dem nicht nur die Kosten (z.B. Gehälter) gedeckt, sondern auch ein „angemessener“ Gewinn erzielt werden kann.

Bei einer solchen Umstellung wären in der DDR Geldbestände von 120 Mrd. DM entstanden, das sind 10 vH der westdeutschen Geldbestände von 1 200 Mrd. DM Mitte 1990. Dies hätte der Forderung der Bundesbank entsprochen, die Relation der ostdeutschen zur westdeutschen D-Mark-Geldmenge dürfe nicht größer sein als die auf ungefähr 10 vH geschätzte Relation des ostdeutschen zum westdeutschen Produktionspotential.

Das zweite Szenario sieht sparerfreundlich aus. Gegenüber den Geldbeständen von Wirtschaft und Staat werden die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lte von 180 Mrd. M bevorzugt, zum Beispiel im Verhältnis 1 zu 1 auf D-Mark-Bestände umgestellt. Damit würden die Passiva des Bankensystems mit 308 Mrd. DM um 108 Mrd. DM höher sein als die Kredite an die Wirtschaft und die „übrigen“ Forderungen und Aktiva (vgl. die Zwischensumme: 200 Mrd. DM). Zur Vermeidung von Überschuldung und Zinsverlusten hätte man dem DDR-Bankensystem „Ausgleichsforderungen“ an den Staat in Höhe eben dieser 108 Mrd. DM, möglichst zu einem Zinssatz von 8%, zuteilen müssen. Dies hätte allerdings dem Postulat widersprochen, den Staatshaushalt vor zusätzlichen Schulden und Zinsausgaben zu bewahren. Eine Belastung des (westdeutschen) Steuerzahlers wurde aber vielfach aus sozialen Gründen für vertretbar gehalten: In der DDR, anders als in Westdeutschland, hatten die Bürger kaum die Möglichkeit, sich am Sachvermögen (Grundstücke, Wohnungen, Produktivkapital) zu beteiligen, sei es in Form von direktem Eigentum, sei es in Form von Aktien und anderen Beteiligungsrechten, sei es in Form von attraktiv verzinsten Staatsanleihen.

Die Währungsumstellung bot die Gelegenheit, dies zum Teil zu korrigieren: Jeder Bürger hätte, seinem Lebensalter entsprechend, Zertifikate erhalten, die zum Erwerb von Eigentum oder Beteiligungen am Sachvermögen berechtigen. Aus stabilitätspolitischen Gründen hätte man zwar Teile der privaten Geldvermögen zunächst einfrieren müssen, aber für den Erwerb von Zertifikaten, Grundstücken, Wohnungen, Aktien und langfristigen Staatsanleihen freigegeben können. Diese Transaktionen hätten zu einer symmetrischen Reduzierung der Aktiva und Passiva des Bankensystems geführt. Die Wohnungswirtschaft hätte die Einnahmen aus dem Verkauf von Wohnungen zur Tilgung ihrer Bankkredite benutzt, der Staat hätte den Erlös aus dem Verkauf von Zertifikaten und Staatsanleihen an die privaten Sparer zur Reduzierung der „Ausgleichsforderungen an den Staat“ verwendet. Die Verwendung von Zertifikaten zum Erwerb von Aktien und sonstigen Beteiligungen an den staatlichen Unternehmen wäre ein reiner Tausch gewesen; er hätte den Geldkreislauf nicht tangiert.

Sicherlich kann ein Mehrverbrauch durch den Verkauf von Zertifikaten und Anleihen finanziert werden. Gesamtwirtschaftlich ist jedoch eine Mehrnachfrage nach Gütern eine enge Grenze gesetzt. Ein (massiver) Verkauf solcher Wertpapiere ist nur mit Kursverlusten möglich; und dies beschränkt Fähigkeit und Neigung der Wertpapierverkäufer zu Mehrausgaben. Zudem führt der mit dem Kursverlust verbundene Zinsanstieg anderenorts zu einer Mindernachfrage nach Gütern, sei es, daß die durch die attraktivere Verzinsung angeregten Wertpapierkäufe nicht nur zu Lasten der Geldhaltung, sondern auch auf Kosten von Ausgaben gehen, sei es, daß kreditfinanzierte Investitions- und Verbrauchsausgaben zu teuer werden³.

Tabelle 2

Bilanz des DDR-Bankensystems
Mrd. Mark der DDR (M) bzw. D-Mark (DM), per Juli 1990

Positionen	M	M:DM	DM
1 Aktiva			
2 Kredite an Unternehmen	242	2:1	121
3 + Wohnungsbaukredite	110	2:1	55
4 = Kredite an die Wirtschaft	352	2:1	176
5 + Normale Kredite an den Staat	34	2:1	17
6 + Sonderkredite an den Staat	36	—	—
7 davon: wegen Neubewertung von Aus-			
landsschulden in konvertibler Währung	(30)	—	—
8 = Kredite an inländische Nichtbanken	422	2,2:1	193
9 Auslandsforderungen			
10 + an RGW-Staaten	18	2:1	9
11 + in konvertibler Währung	28	1:1	28
12 = Kredite insgesamt	468	2:1	230
13 + Sonstige Positionen	21	—	13
14 = Zwischensumme	489	2:1	243
15 + Ausgleichsforderungen (netto)	—	—	26
16 = Summe der Aktiva	489	1,8:1	269
17 Passiva			
18 Einlagen der privaten Haushalte			
19 + Umstellung 1:1	65	1:1	65
20 + Umstellung 2:1	100	2:1	50
21 + Bargeldumlauf	14	2:1	7
22 = Geldbestände der privaten Haushalte	179	1,5:1	122
23 + Einlagen von Unternehmen	102	2:1	51
24 + Einlagen des Staates	16	2:1	8
25 = Geldbestände insgesamt	297	1,8:1	181
26 + Anlagen bei Lebensversicherungen	14	2:1	7
27 Auslandsverbindlichkeiten			
28 + gegenüber RGW-Staaten	1	2:1	0
29 + in konvertibler Währung	56	1:1	56
30 + Reserven für den			
Richtungskoeffizienten ¹⁾	96	—	—
31 + Eigenkapital	25	1:1	25
32 = Summe der Passiva	489	1,8:1	269

1) Reserven für die Rückzahlung von Auslandsschulden in konvertibler Währung.

Quelle: Berechnungen des DIW.

Das dritte Szenario unterscheidet sich vom zweiten darin, daß die Kredite an die Wirtschaft — sie hätten nach der Umstellung mit einer Rate von 2,5 zu 1 rund 140 Mrd. DM betragen — völlig gestrichen werden. Um diesen Betrag erhöht das Bankensystem seine Ausgleichsforderungen — gemäß Szenario 2 noch 108 Mrd. DM — auf 248 Mrd. DM. Der u.a. von den großen Wirtschaftsforschungsinstituten gemachte Vorschlag, die Wirtschaft pauschal von den Altschulden zu befreien, hatte triftige Gründe: In der DDR hatten die Planungsbehörden vielen Unternehmen auch solche Kredite aufgebürdet, die nicht zur Finanzierung von Investitionen notwendig waren.

³ Hierauf haben schon im Frühjahr 1990 die Wirtschaftsforschungsinstitute in Ihrer Gemeinschaftsdiagnose hingewiesen, als sie im Falle einer Eins-zu-Eins-Umstellung für eine befristete oder bedingte Bindung eines Teils der privaten Geldvermögen plädierten. Vgl. Gemeinschaftsdiagnose (1990a).

Diese Kredite mußten deshalb aufgenommen werden, weil die Behörden willkürlich auch solchen Unternehmen Gewinnsteuern („Gewinnabführungen“) auferlegten, die keine Gewinne erzielten, sondern Verluste erlitten. Diesen Unternehmen drohte nach der Einführung der Marktwirtschaft eine Überschuldung, für die sie selber nicht verantwortlich waren. Das manchmal gegen die Streichung von Altschulden vorgebrachte Argument, die Unternehmen müßten lernen, in einer Marktwirtschaft mit Schulden zu leben, entbehrt einer ökonomisch soliden Grundlage und widerspricht dem bewährten Prinzip, daß für eine Überschuldung nur haften sollte, wer für sie verantwortlich ist.

Die von diesen drei Szenarien repräsentierten wichtigsten Postulate waren nicht immer miteinander vereinbar. Es kam zu einem mühsam erstrittenen Kompromiß. So wurden alle auf Mark der DDR lautenden Bestände an Bargeld, Forderungen und Verbindlichkeiten grundsätzlich im Verhältnis von 2 M zu 1 DM umgestellt — mit einer wesentlichen Ausnahme: Für jede Privatperson wurde ein je nach Lebensalter unterschiedlicher Betrag im Verhältnis von 1 zu 1 umgestellt; insgesamt waren dies fast 65 Mrd. DM⁴.

Mit dieser teilweisen Bevorzugung der privaten Sparer kam man dem sozialpolitischen Postulat entgegen, nicht aber der Vorstellung der Bundesbank, die für eine Ausweitung der Geldmenge um 10 vH (rund 120 Mrd. DM) plädiert hatte. Tatsächlich nahm die D-Mark-Geldmenge um 180 Mrd. DM oder rund 15 vH zu.

Auf eine pauschale Streichung der Altschulden wurde verzichtet. Stattdessen bemühte man sich um individuelle Lösungen. Die Treuhandanstalt (THA) — die staatliche Holding der DDR-Unternehmen — legte für jedes Unternehmen eine normative Schuldenquote fest (Anteil der Verbindlichkeiten an den gesamten, auch das Eigenkapital umfassenden Passiva). Richtschnur für diese Quote war die für Westdeutschland ermittelte durchschnittliche Quote in derjenigen Branche, der das jeweilige ostdeutsche Unternehmen zugeordnet wurde. Wenn ein Unternehmen diese Norm überschritt, erhielt es Ausgleichsforderungen an die THA; wenn die Altschulden niedriger als die Norm waren, mußte das Unternehmen Ausgleichs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r THA übernehmen. Diese Lösung schien den Staat (den Steuerzahler) von der Belastung mit Altschulden der DDR-Unternehmen zu verschonen, und sie schien gerecht zu sein, weil sie die Lasten der Altschulden nach „objektiven“ Kriterien auf die Unternehmen verteilte.

Ein weiterer wichtiger Komplex bei der Währungsumstellung waren in der Bilanz des DDR-Bankensystems (vgl. Tabelle 2) die Forderungen an die RGW-Staaten und in konvertibler Währung (Positionen 10 bis 12) und die entsprechenden Verbindlichkeiten (Positionen 28 bis 30). Die Positionen gegenüber den RGW-Staaten wurden im Verhältnis 2 zu 1 umgestellt, die in konvertibler Währung dagegen im Verhältnis 1 zu 1. Die DDR hatte nämlich in ihren Außenwirtschaftsbeziehungen zur Bundesrepublik fingiert, daß eine Mark der DDR gleich einer D-Mark sei. Tatsächlich jedoch

hätten nach der DDR-Kostenrechnung die Auslandspositionen in konvertibler Währung zu einem Wechselkurs von 4,43 M = 1 DM bewertet werden müssen; denn bei der Tilgung von Auslandsschulden in konvertibler Währung hätte man 4,43 Mark für eine D-Mark aufbringen müssen. Damit die Gleichung 1 M = 1 DM bilanzpolitisch zu retten war, wurde ein „Sonderkredit an den Staat wegen Neubewertung von Auslandsschulden in konvertibler Währung“ (Position 8) geschaffen und der „Richtungskoeffizient“ erfunden, eine — meist unverstandene — Kuriosität, die bei der Währungsumstellung unterging, aber im Anhang zu diesem Aufsatz noch einmal auftaucht, wo ihn Liebhaber bilanzoptischer Verschleierungskünste besichtigen können. Hinter beiden Positionen verbergen sich Reserven für die Rückzahlung von Netto-Auslandsschulden in konvertibler Währung.

Die Fiktion „Mark gleich Mark“, die durch die den beiden so verschiedenen Währungen gemeinsame Namenspartikel suggeriert wurde, ist vermutlich aus Gründen des Prestiges aufrechterhalten worden. Dadurch ist allerdings eine Wechselkursillusion erzeugt worden, die die Durchsetzung ökonomisch begründeter Konversionsraten — und das heißt auch die Minimierung des Aufwertungsschocks — erschwert haben dürfte. Dies gilt, wie im folgenden dargelegt, besonders für die Umstellung der Löhne.

2.2 Umstellung von Renten, Löhnen und anderen „laufenden“ Einnahmen

Zu den essentiellen Zielen einer Währungsunion gehört die dargestellte Umstellung der finanziellen Bestände. Aus pragmatischen Gründen mußten aber auch Stromgrößen wie Renten, Löhne, Mieten (nicht jedoch Zinsen!) von Mark auf D-Mark umgestellt werden. Schließlich waren die Menschen auch nach dem 1. Juli 1990 auf laufende Einnahmen angewiesen. Sicherlich waren die aus der Umstellung resultierenden Stromgrößen nur als Provisorium gedacht. Denn nach der Übernahme des westdeutschen Systems der Sozialversicherung sollten die Renten endgültig fixiert werden, und nach Einführung der Vertragsfreiheit auf dem Arbeitsmarkt würde von den Tarifpartnern über die neuen Arbeitseinkommen entschieden werden. Trotzdem war klar: Mit der Umstellung der Renten, Löhne und Mieten würden wichtige Weichen für die weitere Entwicklung von Kosten und Einkommen gestellt werden.

Bei den Renten ging es darum, aus sozialen Gründen den — sehr niedrigen — Lebensstandard der Rentner etwas zu erhöhen oder zumindest ein Sinken aufgrund der erwarteten Mieterhöhungen u.ä. zu verhindern; deren Renten wurden im Verhältnis 1 zu 1 umgestellt und um einen

⁴ 3,2 Millionen Personen bis unter 14 Jahren erhielten jeweils 2 000 DM = 6,4 Mrd. DM. 10 Millionen Personen von 14 bis unter 59 Jahren erhielten jeweils 4 000 DM = 40,4 Mrd. DM. 3,0 Millionen Personen im Alter von 59 Jahren und mehr erhielten jeweils 6 000 DM = 18 Mrd. DM.

Zuschlag ergänzt. Viel schwieriger war das Problem der Umstellung der Löhne. Man wollte nicht nur sozialpolitischen Kriterien gerecht werden, sondern auch von der Kostenseite her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ostdeutschen Wirtschaft sichern, um den Aufbau der ostdeutschen Wirtschaft zu fördern und die Abwanderung von Arbeitskräften nach Westdeutschland in engen Grenzen zu halten. Ein niedriges aktuelles Arbeitseinkommen — so war zu erwarten — würde viele Arbeitnehmer veranlassen, in Westdeutschland für erheblich höhere Realeinkommen zu arbeiten. Noch viel stärker würde aller Erfahrung nach die Abwanderung sein, wenn infolge zu hoher Reallöhne viele Unternehmen schließen müßten und Massenarbeitslosigkeit entstünde.

Die seinerzeit beschlossene Umstellung von Renten und Löhnen im Verhältnis 1 zu 1 schien nach den damals verfügbaren statistischen Informationen sowohl sozialpolitisch als auch ökonomisch gerechtfertigt zu sein. Die meisten Kaufkraftvergleiche kamen zu einer Kaufkraftparität in der Größenordnung von 1 M = 1 DM. Auch bei den Lohnstückkosten (Nominallohne je Einheit des realen Bruttoinlandsprodukts) schien es eine Parität von 1 zu 1 zu geben; denn zu diesem Umstellungssatz betrug nach damaligen Schätzungen sowohl die Löhne je Beschäftigten als auch die Produktivität der Beschäftigten (reales BIP je Beschäftigten) in der DDR ein Drittel der Löhne und der Produktivität in Westdeutschland.

Die Aussagekraft dieser Berechnungen war allerdings sehr begrenzt. Erstens konnten bei den Verbrauchs- und den Investitionsgütern fast nur Quantitäten verglichen werden. Die Qualität und die Verfügbarkeit (Stichwort: Lange Warteschlangen) wurden nicht ausreichend berücksichtigt. Zweitens waren Produktion und Absatz in der DDR durch die Mauer geschützt. Kosten und Preise waren Phantomkosten und Phantompreise. Die Käufer hatten kaum Alternativen. Der Absatz der Produktion im Inland und im RGW-Raum war zwar nicht vollständig, aber doch überwiegend und ohne Risiko gesichert. Die Produktion entsprach überhaupt nicht jenen Ansprüchen an die Umweltverträglichkeit, wie sie in Westdeutschland gestellt wurden. Last but not least: Die Zahl für die Lohnstückkosten ist ein Durchschnitt aus den Kosten für die international gehandelten Güter und den Kosten für die nicht gehandelten Güter (Wohnen, Verkehr, lokal begrenzte Dienstleistungen). Für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ostdeutschen Wirtschaft auf den Weltmärkten sind aber nur die Kosten für die handelbaren Güter maßgeblich. Diese betragen, wie im vorigen Abschnitt dargelegt, ein Mehrfaches der Durchschnittskosten. Die Umstellung der Löhne im Verhältnis von 1 zu 1 kam einer Aufwertung der Mark der DDR auf das Vier- bis Fünffache gleich; mit ihr war der Zusammenbruch der Exportwirtschaft der DDR programmiert.

2.3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Durchführung der Bankenreform und der Währungsumstellung

Mit der Reform des Bankensystems und mit der Vorbereitung der Währungsumstellung wurde schon Monate vor der Währungsunion (1. Juli 1990) begonnen. Schon am 1. April war der erste Schritt zum Aufbau eines zweistufigen Bankensystems getan. Die Staatsbank, die bisher nicht nur Notenbank gewesen war, sondern auch die Kredit- und Einlagengeschäfte mit dem Staat, den staatlichen Unternehmen und der staatlichen Wohnungswirtschaft getätigt hatte, wurde auf ihre Funktionen als Notenbank und auf die Geschäfte mit anderen Kreditinstituten (also nicht mehr mit Nichtbanken) beschränkt. Die Geschäfte mit Staat, Unternehmen und Wohnungswirtschaft wurden von der am 1. April gegründeten Kreditbank AG übernommen und weitergeführt. Hier, wie bei anderen Kreditinstituten, insbesondere Sparkassen, halfen zahlreiche Mitarbeiter westdeutscher Kreditinstitute, die ostdeutschen Kollegen mit der Geschäftstätigkeit unter marktwirtschaftlichen Bedingungen vertraut zu machen.

Zur Vorbereitung der Währungsumstellung errichtete die Deutsche Bundesbank eine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in Berlin und 15 Filialen in der DDR. Dorthin wurden gewaltige Mengen (260 Tonnen) Bargeld (Münzen und Noten) im Wert von 28 Mrd. DM transportiert, so daß am 1. Juli mit der reibungslosen Auszahlung von Bargeld begonnen werden konnte.

Alle in der DDR ansässigen Bürger und Institutionen (Unternehmen, staatliche Stellen, Kreditinstitute, Genossenschaften u.ä.) mußten auf einem einheitlichen Formular einen Antrag auf Umstellung ihrer Geldvermögen stellen und, da kein Bargeld umgetauscht wurde, ihr Bargeld auf ein Konto bei einem Kreditinstitut einzahlen. Maßgeblich für den Umtausch 2 M zu 1 DM oder (vgl. Position 21 in der Tabelle 2) 1 zu 1 war der Stand der Bankeinlagen am 31. Dezember 1989. Die darüber hinausgehenden (geringen) Beträge wurden im Verhältnis 3 M zu 1 DM umgetauscht.

Die Bundesbank räumte den Kreditinstituten in der DDR reichlich Refinanzierungskontingente und die Möglichkeit zur Aufnahme von Lombardkrediten ein. Da es, anders als in Westdeutschland, noch keine erstklassigen Wechsel mit mehreren Akzepten gab, begnügte sich die Bundesbank für einige Zeit damit, einfache, von dem jeweiligen Kreditinstitut selber ausgestellte Wechsel zu kaufen oder zu beleihen (lombardieren). Mit diesen Refinanzierungsmöglichkeiten konnten sich die Kreditinstitute Zentralbankgeld beschaffen, das sie für Bargeldauszahlungen an ihre Einleger und für die Bildung der gesetzlich vorgeschriebenen Mindestreserven (Einlagen bei der Bundesbank) benötigten. Tatsächlich übertrafen die Kreditfazilitäten den Bedarf der Kreditinstitute für diese Zwecke erheblich.

Unmittelbar nach der Währungsumstellung war es keineswegs sicher, daß die Unternehmen liquide bleiben

würden. Deshalb gewährte die Treuhandanstalt ihren Unternehmen Kreditbürgschaften, und der Staat gewährte der Treuhandanstalt Liquiditätskredite. Dies war als eine Überbrückungshilfe gedacht. Tatsächlich hat der desolate Zustand vieler Unternehmen die Treuhandanstalt und den Staat bewogen, jahrelang noch derartige Subventionen zu gewähren.

Besonders groß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Probleme bereitete die Umstellung des DDR-Systems des bargeldlosen Zahlungsverkehrs auf das modernere westdeutsche System. Zunächst gab es beträchtliche Friktionen, die sich in Stockungen der Zahlungsströme, also wochenlangem Warten auf Zahlungseingänge, äußerten. Doch nach einigen Monaten konnten diese Schwierigkeiten überwunden werden.

3. Einige unmittelbare Folgen der Währungsumstellung

Die Umstellung der Währung und die „Umstellung“ des Bankensystems der DDR sind technisch und organisatorisch erstaunlich professionell bewältigt worden. Wie steht es aber mit den ökonomischen Konsequenzen, die unmittelbar aus der Währungsumstellung resultieren?

Eine dieser Folgen war, daß die Unternehmen, die der Treuhandanstalt (THA) unterstanden, mit zu hohen Alt-schulden belastet wurden. Die Schuldenregelung und deren ökonomische Folgen waren und sind in erster Linie ein industrie- und fiskalpolitisches Problem. Immerhin gibt es einige Vorgänge, die auch den Sektor Geld und Währungen berührt haben: die primären Vermögens umschichtungen im Gefolge — aber keineswegs uneingeschränkt: *infolge* — der Währungsumstellung.

Ursprünglich war nach Statistiken der DDR das Sachvermögen der THA-Unternehmen auf ungefähr eine Billion Mark der DDR veranschlagt worden. Angesichts dieser Zahl schlugen Verbindlichkeiten von 230 Mrd. M nicht sonderlich zu Buche. Doch bald mehrten sich die Stimmen, die diese Schätzung als Illusion bezeichneten. So schätzte Anfang September 1990 das DIW das Sachvermögen der THA-Unternehmen auf nur 230 Mrd. DM; im Vergleich dazu fielen die im Verhältnis von 2 zu 1 umgestellten durchschnittlichen (!) Verbindlichkeiten (115 Mrd. DM) schon gravierend ins Gewicht⁵.

Erschreckend war allerdings das Bild, das die Ende 1992 per 1. Juli 1990 für die THA und ihre Unternehmen aufgestellten Eröffnungsbilanzen zeigten. Das Sachvermögen wies zwar mit 215 Mrd. DM die seinerzeit vom DIW geschätzte Größenordnung auf, es stellte sich jetzt jedoch heraus, daß in Höhe von 365 Mrd. DM Rückstellungen, unter anderem für die Sanierung ökologisch verseuchter Böden, gebildet werden mußten, so daß sich für das so bereinigte Sachvermögen ein negativer Wert von 115 Mrd. DM ergab (vgl. Tabelle 3). Nach Berücksichtigung der Nettoschulden (Verbindlichkeiten minus Bankgutha-

Tabelle 3

Bilanz der Treuhandanstalt (THA) per 1. Juli 1990

	Mrd. DM
Sachvermögen	215
— Rückstellungen	365
= Bereinigtes Sachvermögen	-150
— Nettoschulden	80
= Fehlbetrag (Überschuldung)	-230
<i>Quelle: Berechnungen des DIW.</i>	

ben und sonstigen Forderungen) von 80 Mrd. DM schloß die Bilanz der THA mit einem Fehlbetrag, das heißt einer Überschuldung, von 230 Mrd. DM ab.

Bei rigoroser Anwendung des im Westen geltenden Konkursrechts hätten die meisten Unternehmen in Liquidation gehen müssen. Dies durfte natürlich nicht geschehen. Deshalb kam der Staat (mit dem Nebenhaushalt „Erb-lastentilgungsfonds“) für den Fehlbetrag von 230 Mrd. DM auf. Damit ging die Realität noch weit über das hinaus, was seinerzeit das DIW als (schlechte) Alternative zu einer pauschalen Streichung der Altschulden vorausgesagt hatte: Die Altschulden der Unternehmen (damals auf brutto 115 Mrd. DM veranschlagt) werden in zwar betriebswirtschaftlich korrekter, aber volkswirtschaftlich „unproduktiver“ Weise schließlich doch von der Treuhandanstalt direkt oder indirekt übernommen und von dieser auf den Staat und damit letztlich den Steuerzahler abgewälzt.

Mit diesen Transaktionen waren enorme Umschichtungen von Vermögen verbunden (vgl. Tabelle 4). Außerhalb der THA und des Staates wurde mit der Währungsumstellung ein Nettogeldvermögen (Bargeld, Bankeinlagen und sonstige Forderungen minus Verbindlichkeiten) von 160 Mrd. DM „dekretiert“. Hiervon entfielen 140 Mrd. DM auf Inländer (vor allem private Haushalte, aber auch kleinere und mittlere Unternehmen) und 20 Mrd. DM auf das Ausland.

Diesem Nettogeldvermögen von 160 Mrd. DM (dem DM-Gegenwert „kumulierter“ laufender Ersparnisse) stand jedoch ein negatives bereinigtes Sachvermögen von 150 Mrd. DM (der DM-Gegenwert kumulierter Nettoinvestitionen abzüglich der Entwertung durch Rückstellungen) gegenüber. Dieser „Sparüberschuß“ von 310 Mrd. DM wurde durch ein „Entsparen“ anderer Sektoren, vor allem des Staates, ausgeglichen. In Höhe von 55 Mrd. DM verschuldete sich die Wohnungswirtschaft. Der Löwenanteil entfiel jedoch auf den Staat, der den Fehlbetrag (die Überschuldung) der THA und die Ausgleichsverbindlichkeiten gegenüber dem DDR-Bankensystem aus der asymmetrischen Umstellung von dessen Aktiva und Passiva übernahm, um die Tilgungs- und Zinszahlungsverpflichtungen gegenüber den Besitzern des Nettogeldvermögens zu erfüllen.

⁵ DIW (1990).

Tabelle 4

Vermögensumschichtung per 1. Juli 1990
in Mrd. DM

I	Nettogeldvermögen	
	Private Inländer	140
	+ Ausland	20
	= Nettogeldvermögen insgesamt	160
II	Nettoverschuldung (-) der Wohnungswirtschaft des Staates	-55 -255
	wegen Überschuldung der THA	(-230)
	wegen Ausgleichsverbindlichkeiten aus der Währungsumstellung	(-25)
III	= Bereinigtes Sachvermögen der THA (I + II)	-150
<i>Quelle: Berechnungen des DIW.</i>		

Wie hat sich diese Vermögensumschichtung auf den monetären Sektor ausgewirkt? Hat sie dazu beigetragen, daß nicht genügend private Investitionen zu Zuge kamen? Die übliche, partialanalytisch geprägte Antwort müßte lauten: Ohne diese zusätzliche Staatsverschuldung wäre der Kapitalmarktzins deutlich niedriger gewesen. Ohne sie hätte die Bundesbank für ein niedrigeres Zinsniveau auf dem Geldmarkt gesorgt.

Wer so argumentiert, greift zu kurz. Er läßt die Frage offen, wie denn das Alternativszenario aussieht, in dem der Staat die Überschuldung der THA nicht — oder nur zu einem kleinen Teil — übernommen hätte.

Diese Mehrverschuldung des Staates wäre vermieden worden, wenn die Unternehmen in der Lage gewesen wären, aus ihren Erträgen ihre Altschulden zu tilgen und zu verzinsen und zudem die zur Stärkung ihrer Wettbewerbsfähigkeit notwendigen Investitionen zu finanzieren. In diesem Falle wäre das bereinigte Sachvermögen nicht negativ, sondern so groß gewesen, daß die Altschulden keine Überschuldung mit sich gebracht hätten. Hierzu hätten allerdings Staat und Tarifparteien eine effiziente Wirtschaftspolitik verfolgen müssen, die sich mit Schlagworten wie produktivitätsgerechte Lohnpolitik, Entschädigung vor Rückgabe, zukunftsbezogene Subventionsstrategie kennzeichnen läßt.

Wäre in einem solchen — leider Utopie gebliebenen — Szenario der Kapitalmarktzins wirklich durchweg merklich niedriger gewesen, als er tatsächlich war? Vieles spricht dagegen. So wäre die für dieses Szenario unterstellte starke Investitionsdynamik mit einer starken privaten Nachfrage nach Kapital Hand in Hand gegangen. Allerdings wären wegen der hierzu notwendigen moderaten Lohnpolitik die Realeinkommen in Ostdeutschland niedriger gewesen, so daß die Nachfrage nach westdeutschen Produkten geringer gewesen wäre. In Westdeutschland wären somit die Investitionstätigkeit und damit auch die Kapitalnachfrage vermutlich schwächer gewesen. Ein eindeutiges Urteil über die alternative Zinsentwicklung kann es nicht geben, zumal ungewiß ist, wie die Notenbanken in

Westdeutschland und den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reagiert hätten. Doch selbst wenn das alternative Zinsniveau hoch gewesen wäre: Hätte man dies wirklich negativ bewerten müssen? Wäre es nicht vielmehr Ausdruck einer erwünschten Entwicklung, nämlich eines eigenständigen Investitionsprozesses in Ostdeutschland, gewesen?

Ein weiteres Alternativ-Szenario kann man darin sehen, daß der Staat die Übernahme des Fehlbetrags der THA mit Überschüssen an anderen Stellen der öffentlichen Haushalte finanziert hätte. Hierzu hätte er in Westdeutschland von Anfang an radikal die Steuern erhöhen und die Ausgaben kürzen müssen. Wäre — was eine unrealistische Annahme ist — ein solcher Kraftakt gelungen, hätte er den Kapitalmarktzins auf ein relativ niedriges Niveau gedrückt. Dieser niedrige Zins hätte aber nicht als Triebkraft für Investitionen gedient, er wäre vielmehr die Folge einer fiskalpolitisch schon 1990/91 herbeigeführten Rezession in Westdeutschland gewesen, welche die schon in Gang befindliche Konjunkturabschwächung in Westeuropa verstärkt hätte.

Im dritten Alternativ-Szenario wären die Schulden und die Geldvermögen im Verhältnis 3 zu 1 oder gar 4 zu 1 umgestellt worden. Dieser von einigen namhaften Politikern und Ökonomen vorgebrachte Vorschlag ist natürlich aus sozialpolitischen Gründen auf heftige Ablehnung gestoßen. Das Pro und Kontra wurde aber zum Teil auch ökonomisch begründet. Schon gegen die tatsächliche Umstellung der privaten Geldvermögen wurde eingewendet, den Bürgern sei ein Teil ihrer Ersparnisse vorenthalten worden, weil die Kaufkraftparität beim Verbrauch bei 1 zu 1 gelegen habe⁶. Ein solches Argument würde sicherlich für die Sparer in Österreich zutreffen, wenn deren Währung im Verhältnis 10 (statt 7) Schilling zu 1 D-Mark auf eine gemeinsame (europäische) Währung umgestellt würde. Dieses Argument zieht aber dann nicht, wenn uno actu mit der Umstellung der Währung auch eine „Umstellung“ eines planwirtschaftlichen Systems mit künstlich fixierten Preisen auf ein marktwirtschaftliches System stattfindet, dessen Marktpreise die bisherigen Preise obsolet werden lassen.

Auf der gesamtwirtschaftlichen Gleichung (kumulierte) Investitionen gleich (kumulierte) Ersparnisse basiert das Argument, das für eine Umstellung ins Feld geführt wird, die für die privaten Sparer ungünstig gewesen wäre: Die durch die tatsächliche Währungsumstellung begründeten Geldvermögen seien nicht real „gedeckt“ gewesen, da das bereinigte Sachvermögen der THA und ihrer Unternehmen negativ gewesen sei. Auch dieses Argument ist fragwürdig. Zum einen bestand das Sachvermögen der DDR nicht nur aus dem Sachvermögen der Treuhandanstalt und ihrer Unternehmen, sondern auch aus umfangreichen Ländereien, die zwar in das Eigentum der Gebietskörperschaften übergegangen sind, aber eigentlich etwas sind, auf das die ehemaligen Bürger der DDR einen

⁶ Sinn (1992) S. 73.

Anspruch haben, den sie zu DDR-Zeiten nicht durch individuelles Sparen realisieren konnten. Zum anderen hätte man statt der Bilanzexperten den Markt über den Wert des gesamten Sachvermögens der DDR — und damit über den Wert der dahinter stehenden Geldvermögen — entscheiden lassen sollen. Dies war denn auch im „Einigungsvertrag“ vorgesehen worden. So hätte man den Bürgern der DDR Zertifikate zuteilen müssen, die zum Erwerb von Beteiligungen am gesamten Vermögen berechtigen. Kriterium für die Zuteilung hätte die bisherige Lebensarbeitszeit oder (auch) das jeweilige Geldvermögen sein können. Selbstverständlich stellte der Wert des Sachvermögens keine ein für allemal gegebene Größe dar. Er wäre vielmehr sowohl vom Verhalten der Tarifparteien und der staatlichen wirtschaftspolitischen Instanzen als auch von der Art und der Abwicklungsdauer des Beteiligungsmodells abhängig gewesen.

Unterstellen wir einmal, bei Realisierung eines überzeugenden Beteiligungsmodell wäre eine Währungsumstellung von 3 zu 1 politisch durchzusetzen gewesen: Den Kapitalmarkt hätte die Reduktion der THA-Altschulden und damit der potentiellen Schulden des Bundes insoweit nicht tangiert, als *pari passu* mit den Schulden auch die Geldvermögen der Sparer und das daraus zu erwartende Angebot an Kapitalmarktmitteln gekürzt worden wären. Eines wäre allerdings anders gewesen: Mit den niedrigeren Geldvermögen wäre der private Verbrauch unmittelbar nach der Währungsumstellung schwächer gewesen. Hätte dies nicht zu einer Dämpfung des Booms 1990/91, der Inflationsrate und damit auch des (nominalen wie realen) Kapitalmarktzinses geführt?

Diese Frage leitet zu einem Problem über, das seinerzeit Geldpolitiker und Geldtheoretiker umtrieb. Viele von ihnen erwarteten, mit der Währungsumstellung werde ein inflatorischer Geldüberhang aufgebaut, der die gesamtdeutsche Geld- und Währungspolitik bei ihrem Start und vielleicht auch noch Jahre danach belasten werde. Diese Sorgen schienen bestätigt zu werden, als kurz nach der Währungsumstellung deren Ergebnisse bekannt wurden: Die ostdeutsche Geldmenge M3 machte fast 15 vH der westdeutschen aus, während das ostdeutsche Produktionspotential auf allenfalls 10 vH des westdeutschen veranschlagt wurde. Die „neue“ Geldmenge betrug 180 Mrd. DM, während sie nach den Vorstellungen der Bundesbank eher bei 120 Mrd. DM hätte liegen sollen. Der so errechnete „Geldüberhang“ belief sich also auf 60 Mrd. DM.

Die hieran anknüpfenden Sorgen beruhten auf der Quantitätstheoretischen Hypothese, daß es eine hinreichend enge Beziehung zwischen der Geldmenge und dem Preisniveau gebe. Diese Hypothese besagt, daß eine Inflation, das heißt ein anhaltender Kosten- und Preisaufrtrieb entsteht, wenn der Bestand an Geld schneller steige als das Angebot aus Gütern aus der laufenden Produktion. Diese Beziehung gilt allerdings nur in Marktwirtschaften — also bei einigermaßen freier Preisbildung. Sie gilt überdies nur mittel- und langfristig. Mit dieser Hypothese können des-

halb nicht die kurzfristigen Wirkungen einer Währungsunion zwischen einer Markt- und einer Planwirtschaft prognostiziert werden. Wie verhalten sich private Haushalte und Unternehmen, die jahrzehntelang in einer Planwirtschaft gelebt haben, wenn sie über Nacht mit den Bedingungen einer Marktwirtschaft konfrontiert werden? Wie werden sie über ihr „neues“ Geld disponieren?

Diese „neue“ Geldmenge in Ostdeutschland durfte nicht gleichgesetzt werden mit der „alten“ Geldmenge in Westdeutschland. Dort bestand die Geldmenge M3, die geldpolitische Zielgröße der Bundesbank, zum einen aus einem relativ kleinen Bestand an Bargeld und Sichteinlagen, der Geldmenge M1; zum anderen umfaßte sie verzinsliche Sekundärliquidität, das heißt kurz- und mittelfristige Termin- und Spareinlagen. In Ostdeutschland dagegen war M3 *de facto* identisch mit der hoch liquiden Geldmenge M1, denn sie setzte sich aus Bargeld und täglich fälligen (und trotzdem verzinslichen) Spareinlagen zusammen. Das in der Geldmenge M3 steckende Inflationspotential schien also in Ostdeutschland sehr viel größer zu sein als in Westdeutschland. Hierfür sprach auch die Vermutung, der Geldbestand in Ostdeutschland verkörpere einen beträchtlichen Nachholbedarf an Verbrauchsgütern, da die privaten Haushalte wegen der Knappheit an Gütern und der damit verbundenen langen Warteschlangen erhebliche unfreiwillige Ersparnisse gebildet hatten.

Anderes sprach jedoch gegen eine Dramatisierung des „Geldüberhangs“. In Westdeutschland war die Geldmenge M3 nur ein kleiner Teil, nämlich 30 vH, des Bruttogeldvermögens der privaten Haushalte und der Unternehmen. In Ostdeutschland hingegen war die Geldmenge M3 nahezu identisch mit den Bruttogeldvermögen, denn dort konnte man keine rentablen Bankguthaben und Anleihen erwerben. Dies rechtfertigte die Prognose, daß die ostdeutsche Bevölkerung bald dazu übergehen werde, ihr Geld in attraktiv verzinsten Bankguthaben und Anleihen anzulegen.

Diese Prognose ist durch die Entwicklung in den ersten sechs Monaten nach der Währungsumstellung bestätigt worden. Die ostdeutsche Geldmenge M3 sank von 180 Mrd. DM auf 164 Mrd. DM, also um 16 Mrd. DM, während gleichzeitig ein Geldkapital von 19 Mrd. DM aufgebaut wurde. Auch die Struktur der Geldmenge M3 (am 1. Juli noch mit M1 identisch) hat sich erheblich gewandelt. Ende 1990 betrug die Geldmenge M1 nur noch 95 Mrd. DM, während die kurz- und mittelfristigen Termingelder und die Spareinlagen mit gesetzlicher Kündigungsfrist einen Stand von 69 Mrd. DM erreichten⁷. Die Sparer in Ostdeutschland haben also durchaus einen Beitrag zur Stärkung des Kapitalmarktes geleistet.

Im Verlauf von 1990 kam es in Ostdeutschland auch zu einem sprunghaften Anstieg der Nachfrage nach Konsumgütern westdeutscher und ausländischer Herkunft. Er

⁷ DIW (1991a) S. 158.

basierte primär darauf, daß vom Frühjahr 1990 an die Löhne und — bald danach — die Renten in einem erheblichen Tempo zu steigen begannen. Zur Finanzierung dieses Mehrverbrauchs wurde — jedenfalls per saldo — nicht auf die Geldbestände zurückgegriffen; deren Rückgang kam, wie dargelegt, der Bildung von Geldkapital zugute. Gewiß darf ein indirekter Einfluß nicht vergessen werden. Bei einem niedrigeren Geldvermögen hätte das Vorsichtsmotiv viele Haushalte bewogen, aus ihrem laufenden Einkommen weniger für den Verbrauch und mehr für die Ersparnis zu verwenden. Dieser Vermögenseffekt dürfte aber gegenüber dem Einkommenseffekt nicht ins Gewicht gefallen sein.

Die Befürchtung, die Währungsumstellung werde die Währungsstabilität gefährden, bestätigte sich zumindest bis Ende 1990 nicht. Die starke Mehrnachfrage nach Verbrauchsgütern stieß auf ein sehr elastisches Angebot aus

Abbildun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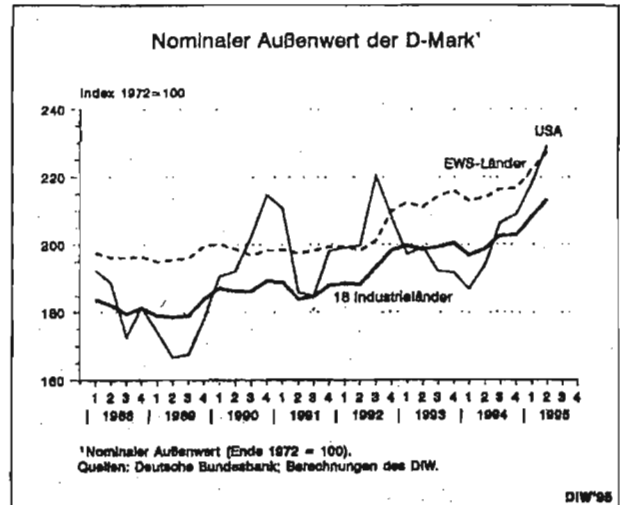


Abbildun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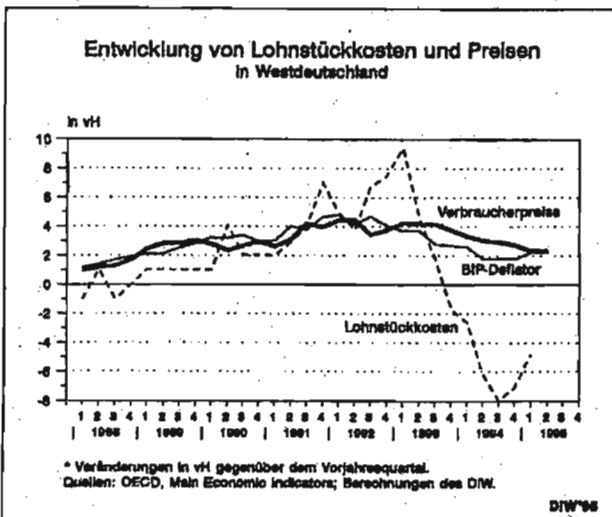


Abbildun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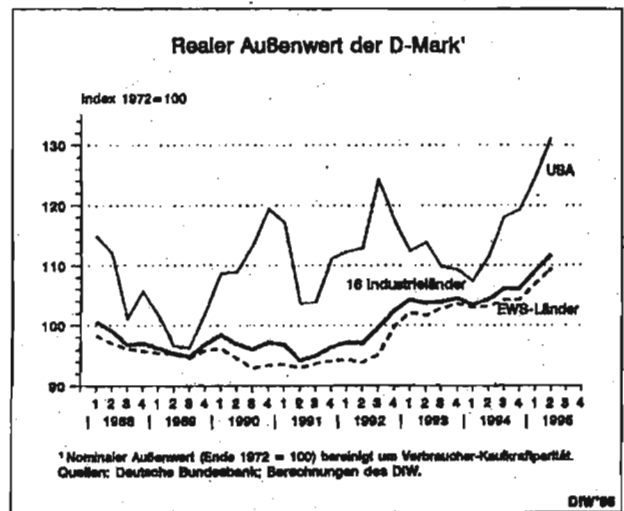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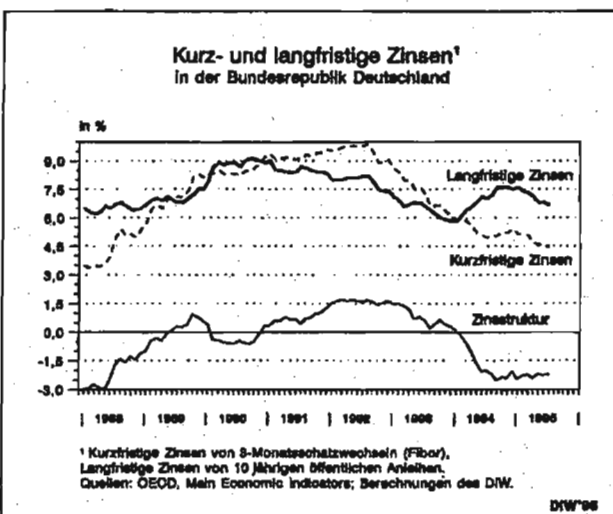


Abbildung 2



westdeutscher und ausländischer Produktion. Die Inflationsrate, das heißt der Anstieg des Preisindex für die Lebenshaltung der privaten Haushalte gegenüber der gleichen Vorjahreszeit, war im Dezember 1990 nicht höher als im Dezember 1989 (Abbildung 1).

Dies beeindruckte offensichtlich auch die Finanzmärkte. Der Kapitalmarktzins, der Anfang Februar, also nach der Ankündigung einer Währungsunion, von 8% auf 9% gestiegen war, verharrte bis Dezember auf diesem Niveau und begann nach der Jahreswende sogar zu sinken (Abbildung 2). Der nominale Außenwert der D-Mark gegenüber dem Durchschnitt der anderen europäischen Währungen blieb ebenfalls stabil (Abbildung 3). Der Außenwert gegenüber dem US-Dollar erhöhte sich sogar — dies allerdings wohl auch deshalb, weil in den USA der Kapitalmarktzins sank und die Inflationsrate noch anzog.

4. Geld und Wahrung im Zeichen der politischen Vereinigung

In stabilitatspolitischer Hinsicht hat also das Jahr 1990 mit einer fur die Geld- und Wahrungspolitik positiven Bilanz abgeschlossen. Doch weitere Herausforderungen standen bevor. Im folgenden Jahrfunft war die Geld- und Wahrungspolitik mit den mittelbaren Folgen der Wa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konfrontiert. Diese Folgen stellten das Konzept der potentialorientierten Geldmengenpolitik auf eine harte Probe, sie wurden in Form stabilitatswidriger Lohnabschlusse spurbar, und sie auerten sich in einem Konflikt zwischen der straffen Geldpolitik in Deutschland und der auf Zinssenkung zielenden Geldpolitik in vielen anderen Landern. Es gab auch andere Belastungen der Geldpolitik. Sie sind aber nicht Gegenstand dieses Beitrags. „Storfaktoren“ wie Finanzinnovationen, die Einfuhrung und die Novellierung der Zinsabschlagsteuer sowie die Einschrankung der steuerpolitischen Wohnungsbauforderung waren auch ohne die Wahrungunion und die politische Vereinigung aufgetreten.

4.1 Potentialorientierte Geldmengenpolitik vor groen Herausforderungen

Von 1975 bis 1990 verfolgte die Bundesbank eine Politik, die an — fur jeweils ein Jahr angekundigten — Geldmengenzielen ausgerichtet ist. Zielgroe war bis 1987 die Zentralbankgeldmenge und danach die Geldmenge M3. Abgeleitet wurden die Ziele aus dem Wachstum des gesamtwirtschaftlichen Produktionspotentials sowie aus dem unvermeidlichen Preisanstieg oder, seit 1986, dem normativen Preisanstieg (2 vH); seit 1988 wird auch der Trend der (sinkenden) Umlaufgeschwindigkeit des Geldes berucksichtigt. Bei der Wahl und der Verfolgung des Geldmengenziels gab es immer wieder erhebliche Probleme, insbesondere im Gefolge der zweiten Olpriiskrise, der rapiden Schwankungen des Dollarkurses und der Turbulenzen auf den internationalen Aktienmarkten im Oktober 1987. Trotzdem hat die Bundesbank am Konzept der potentialorientierten Geldmengenstrategie festgehalten. Im Dezember 1990 beschlo sie, erstmals ein gesamtdeutsches Geldmengenziel vorzugeben.

Die Bundesbank tat dies, obwohl sie erwarten mute, da die geldpolitischen Schwierigkeiten kunftig sehr viel gravierender sein wurden als bisher. So erfuhren die in Jahrzehnten marktwirtschaftlicher Verhaltnisse gewachsenen Beziehungen zwischen den monetaren und den realen Variablen infolge der Wahrungunion mit einer jahrzehntelang planwirtschaftlich ausgerichteten Volkswirtschaft einen Strukturbruch, der weitaus markanter war als die durch fruhere „Schocks“ verursachten Storungen dieser Beziehungen. Zudem waren die statistischen Informationen uber die relevanten Groen in Ostdeutschland auerst durftig. Um den daraus resultierenden Trial-and-error-Proze in den Jahren 1991 und 1992 zu verdeut-

lichen, kommt man leider nicht um das trockene Geschaft herum, die Geldmengenarithmetik mit ihren Tucken zumindest in ihren Grundzugen nachzuvollziehen.

Die Schwierigkeiten begannen schon bei der Ermittlung der Komponente „Wachstum des Produktionspotentials“. Zwar war bei der Vorbereitung der Wahrungsumstellung das damalige, grob geschatzte ostdeutsche Produktionspotential berucksichtigt worden, aber angesichts des Einbruchs bei der Nachfrage nach ostdeutschen Produkten und des dadurch bedingten Ruckgangs der ostdeutschen Produktion wurde es immer fraglicher, ob das ursprunglich geschatzte Produktionspotential ein „marktfahiges“ Guterangebot reprasentiert. Deshalb mute stellvertretend fur die potentielle die tatsachliche Produktion einspringen. Prognostiziert wurde eine Abnahme um 2 1/2 vH. Wegen des geringen Gewichts der ostdeutschen Produktion bedeutete dies, da die Rate des gesamtdeutschen Potentialwachstums mit 2 1/2 vH nur wenig unter der von der Bundesbank fur Westdeutschland veranschlagten Rate lag.

Keine statistischen Probleme warf, als ein normatives Element, die zweite Komponente des Geldmengenziels auf. An dem normativen Preisanstieg von 2 vH sollte nicht geruttelt werden. Sofern die Entwicklung der Lohnstuckkosten in Westdeutschland dieser Norm entsprach, mute allerdings toleriert werden, da wahrend eines mehrjahrigen strukturellen Anpassungsprozesses das Preisniveau in Ostdeutschland starker steigen wurde als in Westdeutschland; denn von einer solchen Anpassung fur sich genommen konnten keine inflatorischen Wirkungen auf das gesamtdeutsche Preisniveau erwartet werden.

Probleme bereitete dagegen die dritte Komponente des Geldmengenziels. Der ubliche Zuschlag von einem halben Prozentpunkt fur den rucklaufigen Trend der Umlaufgeschwindigkeit des Geldes war aus der westdeutschen Entwicklung abgeleitet worden und konnte nicht fur die Geldhaltung in Ostdeutschland reprasentativ sein. Trotzdem entschied sich die Bundesbank fur diesen Zuschlag, mit dem sie — zusammen mit den Komponenten Potentialwachstum (2,5 vH) und Preisnorm (2 vH) auf eine Rate von 5 vH und einen Zielkorridor mit „laufenden“ Zuwachsraten von 4 und 6 vH kam. Allerdings gab es eine Einschrankung. Um dem absehbaren weiteren Abbau des ostdeutschen „Gelduberschusses“ zugunsten der Geldkapitalbildung Rechnung zu tragen, strebte sie eine Entwicklung der Geldmenge in der unteren Halfte des Korridors an.

Schon nach wenigen Monaten wiesen die — freilich unvollkommenen — Daten darauf hin, da der Abbau der ostdeutschen Geldbestande rascher als Ende 1990 erwartet vorankam. Nach Schatzungen des DIW nahmen sie bis Mai 1991 um 18 Mrd. DM ab, nachdem sie im zweiten Halbjahr 1990 schon um 19 Mrd. DM gesunken waren⁸. Aus diesen Grunden entschlo sich die Bundesbank zur Jah-

⁸ DIW (1991b).

Abbildun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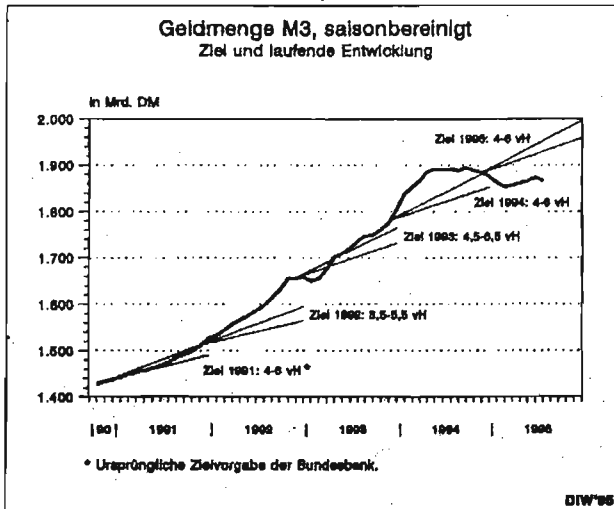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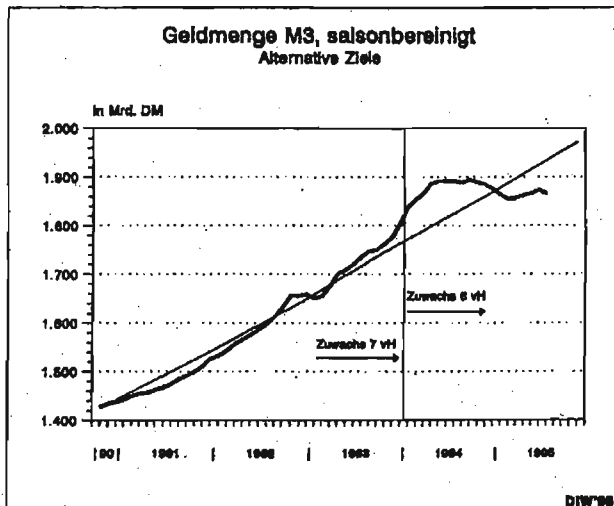


Abbildung 6



resmitte, den Zielkorridor auf 3 bis 5 vH, also um einen Prozentpunkt, herabzusetzen. Doch bald danach begann die gesamtdeutsche Geldmenge, beschleunigt zu expandieren, da der Abbau der ostdeutschen Geldmenge nachließ und in Westdeutschland infolge der ungewöhnlich starken Belebung der Konjunktur der Geldbedarf erheblich zunahm. Immerhin wurde das revidierte Geldmengenziel kaum überschritten; und im ursprünglichen Zielkorridor hätte die Geldmenge nur wenig über dessen Mitte gelegen.

Bis dahin schien sich die traditionelle und nur leicht modifizierte Form der Ermittlung des Geldmengenziels bewährt zu haben. Erst danach sollte offenbar werden, daß sie dem vereinigungsbedingten Strukturbruch im monetären Sektor in keiner Weise gerecht wurde. Für das Jahr 1992 wurde ein gegenüber vorher leicht erhöhter Zielkorridor (3 1/2 bis 5 1/2 vH) bekanntgegeben. Hierbei berück-

sichtigte die Bundesbank einerseits, daß in Westdeutschland das Potentialwachstum wegen der starken Investitionstätigkeit stärker geworden war; andererseits wollte sie der (zu) „reichlichen Liquiditätsausstattung“ der Wirtschaft und dabei auch dem Ihrer Meinung nach immer noch vorhandenen Geldüberhang in Ostdeutschland mit einem Abschlag Rechnung tragen. Tatsächlich wurde das Ziel beträchtlich verfehlt. Die gesamtdeutsche Geldmenge wuchs beschleunigt und übertraf im vierten Quartal 1992 den Vorjahrsstand um 9 1/2 vH, den oberen Rand des Zielkorridors also um vier Prozentpunkte (Abbildung 5). Dieser Überhang wurde bei der Wahl des Geldmengenziels für 1992 mit einem — freilich nicht explizit quantifizierten — Abschlag berücksichtigt.

Allerdings kam im Laufe des Jahres 1992 bei manchen Ökonomen, namentlich den führenden Wirtschaftsforschungsinstituten, der Verdacht auf, daß nicht die Geldmenge zu hoch, sondern das Geldmengenziel zu niedrig gesetzt sei⁹. Für diese Vermutung gab es mehrere Gründe. So hatte sich inzwischen die westdeutsche Konjunktur merklich abgekühlt. Zu denken gab auch die Entstehung und Verbreiterung einer inversen Zinsstruktur, d.h. die Tatsache, daß bis zum Herbst die bis dahin steigenden kurzfristigen Zinsen die — seit Anfang 1991 unter Schwankungen rückläufigen — langfristigen Zinsen zunehmend übertrafen. Eine solche Entwicklung gilt als ein Indikator dafür, daß vom monetären Sektor — also auch von der Geldpolitik — ein restriktiver Effekt auf die Wirtschaft ausgeht¹⁰. Nun hat die inverse Zinsstruktur für den Indikator Geldmenge M3 eine unangenehme Kehrseite. Sie führt nämlich dazu, daß die Geldmenge M3 nicht, wie man bei einem konjunkturell restriktiven Vorgang annehmen sollte, verlangsamt zunimmt, sondern daß sie beschleunigt wächst. Denn solange die kurzfristigen Zinsen relativ hoch sind und dabei vielleicht auch noch steigen, während trotz einiger Ansätze zum Sinken der langfristigen Zinsen keine wirklich nachhaltigen Kursgewinne bei langfristigen Titeln, z.B. Anleihen, erwartet werden, lohnt es sich, Gelder, die eigentlich für die langfristige Anlage vorgesehen sind, in Form kurzfristiger Termingelder, einer wichtigen Komponente der Geldmenge M3, zu „parken“.

Freilich ist ein solcher Effekt konjunktureller, also transitorischer Natur und sollte deshalb eine mittelfristig ausgerichtete Geldmengenpolitik, folglich auch nicht das Geldmengenziel tangieren. Für die Forderung, das Geldmengenziel zu revidieren, mußten andere Argumente ins Feld geführt werden. So ergab eine Überprüfung des Trends der Umlaufgeschwindigkeit durch die Institute, daß hierfür nicht ein halber, sondern ein ganzer Prozentpunkt zum Geldmengenziel zugeschlagen werden mußte.

Weit mehr fiel bei der Überprüfung des Geldmengenziels ein Argument ins Gewicht, das ausschließlich verein-

⁹ Gemeinschaftsdiagnose (1992).

¹⁰ Krämer und Langfeld (1993) und DIW (1994).

gungsbedingt war: Durch die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wurden die bisher für das Geldmengenkonzept der Bundesbank maßgeblichen Relationen zwischen monetären und realen Größen für einige Jahre gleichsam außer Kraft gesetzt. Das Konzept der Bundesbank beruht auf einer speziellen Version der Quantitätsgleichung. Dieser Gleichung zufolge ist das nominale, d.h. zu jeweiligen Preisen bewertete Bruttoinlandsprodukt (BIP), also das Produkt aus dem realen BIP und dessen „Preisniveau“ (Deflator), gleich der Geldmenge multipliziert mit deren Umlaufgeschwindigkeit. Bis zur Währungsunion war die Entwicklung des nominalen Bruttoinlandsprodukts ein brauchbarer Indikator für die Entwicklung des gesamtwirtschaftlichen Transaktionsvolumens und des dadurch bedingten Geldbedarfs. Ebenfalls war das (potentielle wie tatsächliche) reale Bruttoinlandsprodukt eine einigermaßen verlässliche „proxy“ für das (potentielle wie realisierte) gesamtwirtschaftliche Angebot von Waren und Diensten.

Zwar dürften die Inlandsausgaben für Verbrauch und Investitionen einen besseren Indikator für das gesamtwirtschaftliche Transaktionsvolumen abgeben als das nominale Inlandsprodukt, aber dieser Umstand spielte solange keine Rolle, wie die Relation zwischen diesen beiden Größen annähernd gleich blieb. Nach der Währungsunion hat sich die Relation jedoch für einige Jahre markant geändert. Im Jahre 1991 betragen die Inlands-

ausgaben in Ostdeutschland 358 Mrd. DM (Tabelle 5, Spalte 3). Das nominale Bruttoinlandsprodukt hatte dagegen nur einen Wert von 206 Mrd. DM (Spalte 2). Der Überschuß der Ausgaben über das Bruttoinlandsprodukt belief sich auf 152 Mrd. DM. Dieser Überschuß wurde durch Transfers und damit auch über hohe Staatsdefizite Westdeutschlands finanziert und real durch einen Einfuhrüberschuß (einen negativen Außenbeitrag, Spalte 4) real gedeckt. Die Relationen zwischen den Inlandsausgaben und dem Bruttoinlandsprodukt waren deshalb sehr viel höher als in Westdeutschland; sie übertrafen diese um über 80 vH (Spalte 5). Die Relationen waren deshalb in ganz Deutschland um 6 vH höher als in Westdeutschland.

Nach gängiger Meinung hätte man einen Mehrbedarf an Zahlungsmitteln nur zur Finanzierung des ostdeutschen Inlandsprodukts, aber nicht auch noch zur Finanzierung des Überschusses der Ausgaben über die Produktion rechtfertigen können. So hätte man die Inlandsnachfrage in Westdeutschland in entsprechendem Umfang zurückdrängen müssen, um eine inflatorische Überforderung des Produktionspotentials zu vermeiden. Tatsächlich ist mit der monetären Dämpfungspolitik der Bundesbank nur ein vergleichsweise kleiner Teil der westdeutschen Inlandsnachfrage „gekappt“ worden. Trotzdem beschleunigte sich der Preisauftrieb in Westdeutschland weitaus weniger, als man angesichts des Nachfragebooms hätte befürchten müssen. Denn die deutsche Wirtschaft konnte zur Deckung der überaus starken Mehrnachfrage nicht nur auf ein reichliches Angebot aus westdeutscher Produktion, sondern auf ein sehr elastisches Auslandsangebot zurückgreifen. Ein Spiegelbild dieses Vorgangs ist die Außenwirtschaftsbilanz, hier in der Abgrenzung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 Hatte diese Bilanz im Jahre 1989 für Westdeutschland noch einen Überschuß von 120 Mrd. DM ausgewiesen, so schloß sie in den Jahren 1991 und 1992 für ganz Deutschland mit einem — wenn auch geringen — Minus ab¹¹. Die extrem hohen Ausfuhrüberschüsse Westdeutschlands gegenüber Ostdeutschland und dem Ausland in den Jahren 1991 und 1992 wurden vollständig durch die Einfuhrüberschüsse Ostdeutschlands absorbiert.

Ein erheblicher Teil dieses zusätzlichen Transaktionsvolumens beruhte auf einer über mehrere Jahre gestreckten Anpassung administrativer Preise wie Wohnungsmieten und Heizkosten sowie den dadurch bedingten staatlichen Subventionen (Zuschüsse zu den Mieten und den Heizkosten). Die Institute berücksichtigten bei ihren das Geldmengenziel betreffenden Korrekturvorschlägen nur diesen Teil. Sie veranschlagten hierfür einen Mehrbedarf

Tabelle 5
Nominales Bruttoinlandsprodukt und Inlandsausgab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Mrd. DM, zu jeweiligen Preisen

Jahre	Bruttoinlandsprodukt	Inlandsausgaben	Außenbeitrag 2-3	Relation 3:2
1	2	3	4	5
Westdeutschland				
1988	2096	1986	110	0,95
1989	2224	2104	120	0,95
1990	2426	2284	142	0,94
1991	2628	2499	129	0,95
1992	2813	2623	190	0,93
1993	2854	2638	216	0,92
1994	2978	2737	241	0,92
Ostdeutschland				
1991	206	358	-152	1,74
1992	263	458	-195	1,74
1993	305	512	-207	1,68
1994	343	565	-222	1,65
Deutschland insgesamt				
1991	2854	2858	-4	1,00
1992	3076	3081	-5	1,00
1993	3159	3150	9	1,00
1994	3321	3302	19	0,99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und Berechnungen des DIW.

¹¹ In der Zahlungsbilanzstatistik werden für 1991 und 1992 Leistungsbilanzdefizite in der Größenordnung von 30 Mrd. DM ausgewiesen. Dies hängt damit zusammen, daß dabei auch ein beträchtliches Defizit in der Bilanz der Übertragungen berücksichtigt wird. Überdies gibt es bei den Ausfuhr- und Einfuhr von Waren und Diensten auch Abgrenzungsunterschiede zwischen der Zahlungsbilanzstatistik und der in der Tabelle zugrunde gelegten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

an Geld von mindestens einem Prozentpunkt¹². Mit diesem Zuschlag wurde auch bei der Empfehlung eines Geldmengenziels für 1993 kalkuliert; erst für 1994 wurde er nicht mehr berücksichtigt, da zu diesem Zeitpunkt der Anpassungsprozeß weitgehend abgeschlossen zu sein schien. Mit diesem Zuschlag (mindestens 1 vH) und den Komponenten Potentialwachstum (3 vH), Preisnorm (2 vH) und Umlaufgeschwindigkeit des Geldes (1 vH) kamen die Institute für 1992 zu einem Geldmengenziel, dessen Einhaltung für stabilitäts- und wachstumsgerecht gehalten wurde, von mindestens 7 vH und zu einem Zielkorridor von 6 bis 8 vH.

Dies hatte weitreichende Konsequenzen. Wenn die Zielvorgabe „richtig“ war, mußte sie auch für das Jahr 1991 wie für das Jahr 1993 gültig sein. Das DIW hat sich deshalb die Frage vorgelegt: Wie wäre die Entwicklung der Geldmenge zu beurteilen, wenn schon vom vierten Quartal 1990 an durchgängig bis Ende 1993 ein Geldmengenziel von 7 vH (Abbildung 6) gewählt worden wäre; dabei hätte man den Toleranzbereich für Abweichungen vom Zielpfad nicht, wie die Bundesbank, mit einem Trichter, sondern mit einem von Anfang an gleich breiten Band von +1 vH und -1 vH markieren müssen.

In der Tat wäre das Urteil gänzlich anders ausgefallen. Im vierten Quartal 1991 lag die Geldmenge um gut 5 vH über dem Vorjahreswert und damit deutlich unter dem alternativen Ziel. Diese Unterschreitung wäre mit dem strukturellen Rückgang der ostdeutschen Geldmenge zu rechtfertigen gewesen. Ende 1992 hingegen wäre die Geldmenge in der oberen Hälfte des Zielbandes „gelandet“, das Ziel wäre also eingehalten worden. Auch 1993 wäre, da die Geldmenge nur knapp über dem Zielband gelegen hätte, kaum eine Zielverfehlung zu registrieren gewesen. Nimmt man hinzu, daß die Geldmenge in den Jahren 1992 und 1993 durch die inverse Zinsstruktur vorübergehend aufgebläht worden ist, sieht das Bild noch moderater aus. Hätte nämlich die Bundesbank die kurzfristigen Zinsen bis zum Herbst 1992 nicht erhöht, sondern sie schon im Frühjahr, als die Anzeichen für eine konjunkturelle Abschwächung unübersehbar geworden waren, zügig zu senken begonnen, wäre die monetäre Expansion schon 1992 gedämpft worden. Daß der Wechsel von einer inversen zu einer normalen Zinsstruktur bei stabilen oder gar sinkenden langfristigen Zinsen die Expansion der Geldmenge M3 dämpfen kann, hat die Bundesbank selber konzediert. So hat sie auf der Pressekonferenz vom 22. Dezember 1994 die Auflösung des „Liquiditätsstaus“, der sich im ersten Halbjahr 1994 gebildet hatte, auch als einen Erfolg ihrer Zinsenkungspolitik im ersten Halbjahr 1994 gewertet (Abbildungen 2 und 5).

Unter diesen Umständen hätte das Urteil über die Geldmengenpolitik für die Jahre 1991 bis 1993 durchaus positiv gelautet: Die Geldmenge hätte sich in der Mitte, vielleicht sogar in der unteren Hälfte des Zielbandes bewegt. Niemand hätte einen triftigen Grund gehabt, von einem inflatorischen und deshalb abzubauenen Geldüberhang zu

sprechen. Zumindest bis 1993 hätte sich jeder Streit über die Fragwürdigkeit der Geldmengenpolitik erübrigt.

Gegen die These, die tatsächliche monetäre Expansion habe die Stabilität des Preisniveaus nicht gefährdet, scheint allerdings die Tatsache zu sprechen, daß sich der Anstieg des westdeutschen Preisindex für die Lebenshaltung von 2,8 und 2,7 vH in den Jahren 1989 und 1990 auf über 4 vH in den beiden folgenden Jahren beschleunigt hat. Dieser Einwand sticht aber nicht. Denn mit ihm wird das „Wesen“ der potentialorientierten Geldmengenpolitik völlig verkannt. Danach soll die Notenbank nur den monetären Rahmen dafür setzen, daß das wachsende gesamtwirtschaftliche Produktionspotential auf mittlere Sicht möglichst optimal, und das heißt auch bei einem möglichst stabilen gesamtwirtschaftlichen Preisniveau, ausgeschöpft werden kann. Diese Politik soll also eine Chance gewähren. Wie sie genutzt wird, wie also das Angebot an Geld für mehr Produktion und für steigende Preise verwendet wird, liegt nicht mehr im „Kompetenzbereich“ der Notenbank, sondern wird von den übrigen am Wirtschaftsprozess Beteiligten entschieden. Eine tragende Rolle spielt nolens volens die Lohnpolitik, aber auch die Wechselkurspolitik im Rahmen des Europäischen Währungssystems (EWS) hat nicht wenig beizusteuern.

4.2 Spannungen zwischen Geld-, Lohn- und Wechselkurspolitik

Für die Jahre 1991 und 1992 kamen angesichts der vereinigungsbedingt überaus guten Absatz- und Gewinnentwicklung Lohnabschlüsse zustande, die zunehmend über den Produktivitätsfortschritt hinausgingen (Abbildung 1). Ein Teil dieser zusätzlichen Kosten wurde an die Endabnehmer der Produktion, namentlich die privaten Verbraucher, weitergegeben. Dies schlug sich in einer nennenswerten Beschleunigung der Verbraucherpreise nieder. Zum nicht geringen Teil ging die Kostensteigerung aber auch zu Lasten der Gewinnspannen. Insoweit hat sie die Rezession und die dabei entstehende Arbeitslosigkeit 1992/93 erheblich verschärft.

Eine nicht unwesentliche Rolle bei der Aufteilung des von der Bundesbank vorgegebenen monetären Spielraums auf reales Wachstum und auf Preissteigerungen spielt auch die Wechselkurspolitik innerhalb des EWS. Vom Frühjahr 1987 bis Mitte 1992 blieben die Währungsparitäten unverändert. Obwohl in einigen Ländern, die am Wechselkursmechanismus des EWS teilnahmen, die Kosten und Preise ständig stärker stiegen als in den übrigen Ländern, setzte sich die Überzeugung durch, „das EWS sei so gut wie eine Währungsunion“. Dieser Glaube wurde „als Illusion entlarvt“, als es Anfang Juni 1992 zu Währungsturbulenzen kam und im August 1993 die Band-

¹² Gemeinschaftsdiagnose (1992), S.590.

breiten im EWS drastisch erweitert wurden¹³. So gewann die Einsicht an Boden, daß diese Krisen wahrscheinlich vermieden worden wären, wenn die Währungsparitäten schon erheblich früher den Kosten- und Preisdisparitäten angepaßt worden wären. Für die D-Mark hätte dies eine nominale Aufwertung bedeutet, und die reale Abwertung der D-Mark, die ja auf einen „Inflationsimport“ hinauslief, wäre vermieden worden (Abbildung 4). Wäre eine solche Aufwertung zum Beispiel schon im Jahre 1990 vorgenommen worden, hätte dies die stabilitätspolitische Bewältigung des vereinigungsbedingten Booms erheblich erleichtert. Der Boom wäre von der Seite der Außenwirtschaft gedämpft worden, der Preisauftrieb und wahrscheinlich auch der Anstieg der Löhne wären geringer ausgefallen.

Offen bleiben muß allerdings die Frage, ob und inwieweit eine rechtzeitige Aufwertung der D-Mark den geldpolitischen Konflikt mit den westeuropäischen Partnerländern entschärft hätte. Dieser Konflikt entstand schon im Jahre 1991, als Westeuropa bereits auf dem Wege in eine Rezession war. Die westeuropäischen Ländern waren deshalb bestrebt, ihre Zinsen zu senken. Sie zögerten aber damit, um ihre Währungen gegenüber der Ankerwährung D-Mark nicht unter Druck geraten zu lassen und schließlich abzuwerten. Sie drängten deshalb die Bundesbank, bei einer europäischen Zinssenkungsaktion den Vorreiter zu spielen.

Der damit verbundene Vorwurf, die Bundesbank beweise keine Solidarität mit Deutschlands westeuropäischen Nachbarn, war ungerecht. Denn Westeuropa erhielt vom vereinigungsbedingten Boom in Westdeutschland erhebliche Impulse. Man hätte deshalb Verständnis dafür aufbringen müssen, daß die Bundesbank gesetzlich verpflichtet war, diesen Boom so weit einzudämmen, daß inflatorische Wirkungen vermieden werden konnten. Die westeuropäischen Partnerländer hätten natürlich eine Alternative gehabt. Sie hätten einer merklichen Aufwertung der D-Mark — und damit einer entsprechenden Abwertung ihrer eigenen Währungen zustimmen können. Dies hätte ihre eigene Wettbewerbsposition gegenüber der Bundesrepublik verbessert. Doch einem solchen Schritt mehreres entgegen. Zum Teil waren es Gründe des Presti-

ges. Eine Rolle spielte aber auch das hartnäckige Festhalten an den alten Paritäten durch einige Mitgliedstaaten, die die „De facto-Währungsunion“ und damit die Aussicht auf baldige Einbindung der Bundesbank in eine institutionelle europäische Lösung nicht gefährden wollten.

Der Vorwurf, die Bundesbank halte an zu hohen Zinsen fest, war erst von 1992 an berechtigt. Denn jetzt gab es binnenwirtschaftliche Vorgänge, nämlich rezessive Tendenzen auch in Westdeutschland, auch als Vorboten einer nachlassenden Kosten- und Preissteigerung, die die Forderung nach zügigen Zinssenkungen begründeten. Der nun als mittelbare Folge der deutschen Vereinigung entstandene Konflikt mit unseren Nachbarländern war vermeidbar. Vor allem: Eine raschere Zinssenkung hätte nicht nur diesen Konflikt entschärft, sondern auch die Rezession in Westdeutschland gemildert und verkürzt.

Damit ist eine einmalige, durch den vereinigungsbedingten Aufschwung gebotene Chance vertan worden: Die westdeutsche Wirtschaft hatte nach der Überwindung der im Gefolge der zweiten Ölpreiskrise entstandenen Rezession bis weit in die achtziger Jahre hinein ein zwar recht stetiges, aber beschäftigungspolitisch nicht ausreichendes Wachstum aufgewiesen. Zunächst dank einer recht expansiven Geldpolitik und einer moderaten Lohnpolitik und danach im Zuge des von der Geldpolitik unterstützten vereinigungsbedingten Aufschwungs ist die westdeutsche Wirtschaft über kräftige Investitionen und eine dadurch bedingte merkliche Zunahme des Produktionspotentials auf einen befriedigenden Wachstumspfad gelangt. Auf einer solchen, anhaltenden Bergfahrt, auf der man natürlich immer wieder einige Schluchten (Konjunkturabschwächungen, aber keine gravierenden Rezessionen) hätte passieren müssen, wäre die westdeutsche Wirtschaft in absehbarer Zeit dem Gipfel nähergekommen, nämlich einem Maximum der Schaffung neuer Arbeitsplätze in Westdeutschland und — indirekt — auch in Ostdeutschland. Tatsächlich erhielt die westdeutsche Wirtschaft im Jahre 1992 die Eintrittskarte zu einer steilen Talfahrt. Diese Karte ist von der Lohnpolitik ausgestellt worden. Aber auch die Geldpolitik war beteiligt. Sie hat sich dieser Talfahrt zu spät und nicht energiegelich genug entgegengestellt.

문서 번호 66

은행에 의한 신탁청 관리기업의 인수

1995 년 1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Bundesregierung, Treuhandanstalt, Bankenverbände,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in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Irmgard Karwatzki (CDU),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Christa Luft (PDS)

내용:

이 문서는 동독의 모드로우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민사당 소속 크리스타 루프트 연방의회 의원의 질의에 이름가르트 카르바츠키 연방재무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신탁청 그리고 은행협의회는 현재 신연방지역의 기업을 위한 은행관련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 경에는 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차관은 나아가 은행이 100 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는 여덟 개의 기업과 그 외에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15 개의 기업을 밝혔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7

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16. Januar 1995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Verzeichnis der Fragenden

<i>Abgeordnete</i>	<i>Nummer der Frage</i>	<i>Abgeordnete</i>	<i>Nummer der Frage</i>
Büttner, Hartmut (Schönebeck) (CDU/CSU)	10, 11, 12, 13	Kressl, Nicolette (SPD)	16
Buntenbach, Annelie (BÜNDNIS 90/DIE GRÜNEN)	1, 2	Dr. Luft, Christa (PDS)	17, 18, 19, 20
Ferner, Elke (SPD)	38, 39, 40	Mehl, Ulrike (SPD)	28
Fuchtel, Hans-Joachim (CDU/CSU)	29, 30, 31, 32	Poß, Joachim (SPD)	21, 25
Götz, Peter (CDU/CSU)	26, 27	Rennebach, Renate (SPD)	34, 35, 36, 37
Grasedieck, Dieter (SPD)	3, 9	Schmidt, Albert (Hitzhofen) (BÜNDNIS 90/DIE GRÜNEN)	43
Grotz, Claus-Peter (CDU/CSU)	41, 42	Spiller, Jörg-Otto (SPD)	22
Hofmann, Frank (Volkach) (SPD)	14, 15	Dr. Thalheim, Gerald (SPD)	23
Koschyk, Hartmut (CDU/CSU)	4	Vergin, Siegfried (SPD)	24
Kossendey, Thomas (CDU/CSU)	5, 6, 33	Wieczorek-Zeul, Heidemarie (SPD)	7, 8

Unabhängig davon soll der Solidaritätszuschlag – was für die Unternehmen wie für die Arbeitnehmer wichtig ist – keine Dauerregelung werden.

Der Solidaritätszuschlag ist zwar bis auf weiteres zur Finanzierung der hohen Transferzahlungen des Bundes für die neuen Länder im Rahmen des Finanzausgleichs notwendig. Sinken diese Belastungen oder steigen die Einnahmen aus dem Solidaritätszuschlag stärker als im Finanzplan veranschlagt, wird er entsprechend zurückgeführt.

Nach den vorliegenden Wirtschaftsdaten der führenden Wirtschaftswissenschaftsinstitute für die nächsten Jahre geht die Bundesregierung davon aus, daß noch in dieser Legislaturperiode erste Schritte zum Abbau des Solidaritätszuschlags möglich sind.

- | | |
|--|--|
| <p>17. Abgeordnete
Dr. Christa Luft
(PDS)</p> | <p>In welchem Umfang hat die deutsche Kreditwirtschaft ihre Zusage vom Februar 1993, „zusätzlich eine Milliarde DM in den Privatisierungsprozeß von sanierungsfähigen Unternehmen der Treuhandanstalt im eigenen Risiko einzubringen“, zum Jahresende 1994 realisiert?</p> |
| <p>18. Abgeordnete
Dr. Christa Luft
(PDS)</p> | <p>Wie viele Arbeitsplätze wurden in den vollständig erworbenen Unternehmen vertraglich vereinbart; wie viele in den Unternehmen, an denen Beteiligungen erworben wurden?</p> |

Antwort der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in Irmgard Karwatzki vom 12. Januar 1995

Zwischen Bundesregierung, THA und den Bankenverbänden haben in den letzten Monaten zahlreiche Gespräche stattgefunden, in denen die Umsetzung der von den Banken im Rahmen des Solidarpakts gegebenen Zusage im einzelnen erörtert wurde.

Die Banken haben sich nicht nur an unmittelbar von der Treuhandanstalt erworbenen Unternehmen engagiert, sondern auch an bereits privatisierten Unternehmen, die dringend weiterer finanzieller Unterstützung bedurften.

In weiteren Gesprächen soll in den nächsten Wochen ein Gesamtüberblick hierüber gegeben werden.

- | | |
|--|---|
| <p>19. Abgeordnete
Dr. Christa Luft
(PDS)</p> | <p>Wie viele Unternehmen wurden durch die Banken vollständig erworben, an wie vielen wurden Beteiligungen erworben?</p> |
| <p>20. Abgeordnete
Dr. Christa Luft
(PDS)</p> | <p>Um welche Betriebe und um welche Branchen handelt es sich bei den erworbenen Unternehmen?</p> |

**Antwort der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in Irmgard Karwatzki
vom 12. Januar 1995**

Nach derzeitigem Kenntnisstand haben sich die Banken an folgenden Unternehmen zu 100% beteiligt:

- Chemnitzer Spinnereimaschinenbau (Maschinenbau)
- Kändler Maschinenbau (Maschinenbau)
- Nordmöbel (Möbelproduktion)
- Stendaler Landbäckerei (Nahrungs- und Genußmittel)
- Schweriner Schloßbrauerei (Nahrungs- und Genußmittel)
- Innovative Fertigbäder (Baunebengewerbe)
- Märkische Faser Premnitz (Textilindustrie)
- Thüringische Nadel Ichtershausen (Metallverarbeitung)

An folgenden Unternehmen ist die Beteiligung geringer als 100%:

- Großenhainer Textilmaschinenbau (Maschinenbau)
- Spinnereimaschinenbau Leisnig (Maschinenbau)
- Rapido Waagen- und Maschinenfabrik (Maschinenbau)
- Erste Baugesellschaft Leipzig (Bauhauptgewerbe)
- Brehmer Buchbindereimaschinen (Maschinenbau)
- Stadtbau Frankfurt/Oder (Bauhauptgewerbe)
- Mühl Produkt & Services (Baustoffgroßhandel)
- RFT Staßfurt (Elektrotechnik)
- Wernersgrüner Brauerei (Nahrungs- und Genußmittel)
- Bremshydraulik Limbach-Oberfrohna (Maschinenbau)
- Blechwarenverarbeitung Schleiz (Metallverarbeitung)
- Entwicklungsgesellschaft Südharz Kyffhäuser (Dienstleistungen)
- Jagdwaffen Suhl (Metallverarbeitung)
- Fischhandelsunion FIHA (Nahrungs- und Genußmittel)
- Ingenieurhochbau Gera (Bauhauptgewerbe)

21. Abgeordneter **Joachim Poß** (SPD) Auf welche Steuern ist es zurückzuführen, daß die Steigerungsraten der Steuereinnahmen in den neuen Ländern insgesamt von 1995 bis 1998 absinken (vgl. Antwort auf Frage 47 in Drucksache 12/160)?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Kurt Falthauer
vom 16. Januar 1995**

Die Veränderungsdaten der Steuereinnahmen in den jungen Ländern sind am Anfang des Zeitraums 1995 bis 1998, insbesondere im Jahre 1995, aus mehreren Gründen stark nach oben verzerrt. Zum einen führt der aktuelle starke wirtschaftliche Aufschwung zu hohen Zuwachsraten mit entsprechenden Folgen bei den Steuereinnahmen. Die Zuwachsraten werden sich im Zuge des fortschreitenden Aufholprozesses normalisieren, da die Basis für den jeweiligen Zuwachs höher wird. Zum zweiten bewirkte die sich nach Überwindung der Anfangsschwierigkeiten steigernde Effizienz

문서 번호 67

바이에른 주은행에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의 매각

1995 년 3 월 28 일

담당자 / 기관: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Barbara Höll (PDS)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 민사당의 바바라 뢰일 의원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답변을 통해 연방정부는 독일신용은행이 1990 년 4 월 1 일에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의 자산은 연방예산에 이양되지 않았다. 독일신용은행의 민영화는 1994 년 8 월 30 일에 베를린에서 신탁청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작되었다. 1994 년 12 월 29 일에 도입된 기업과 관련된 업무의 이양에 관한 신탁청의 규정에 따라 1995 년 1 월 1 일자로 연방정부가 독일신용은행의 소유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독일신용은행의 매각을 지연시키지는 않았다. 바이에른주은행의 경우 매각계약을 통해 채권이 아니라 독일신용은행의 주식을 획득하였다. 독일신용은행의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1995 년 연방예산안 초안 제 0802 장 항목 1330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933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Dr. Barbara Höll
und der weiteren Abgeordneten der PDS**
— Drucksache 13/704 —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at am 22. Februar 1995 im Rahmen seiner „Finanznachrichten“ 7/95 die Erklärung der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in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zum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vom 31. Januar 1995 veröffentlicht. Darin wird mitgeteilt, daß die „Hausbank der mittlerweile fast vollständig privatisierten Treuhandunternehmen sowie der Wohnungsbaugesellschaften (...) nach einer internationalen Ausschreibung und intensiven Verkaufsverhandlungen nunmehr privatisiert werden (konnte)“.

Die „Deutsche Kreditbank“ wurde in der DDR am 19. März 1990 auf der Grundlage des Aktiengesetzes aus dem Jahre 1937 gegründet. Mit einem zwischen der Staatsbank der DDR und der Deutschen Kreditbank am 21. Juni 1990 geschlossenen Einbringungsvertrag wurden die Besitz- und Schuldposten aus der Geschäftstätigkeit der Staatsbank der DDR – soweit es sich um bankgeschäftliche Aktivitäten handelte – auf die Deutsche Kreditbank übertragen. Ebenfalls am 21. Juni 1990 übertrug die Staatsbank der DDR ihre Beteiligung an der Deutschen Kreditbank auf die Treuhandanstalt, die später auch die Aktien der anderen Gründungsaktionäre erwarb und seit Anfang 1993 das gesamte Grundkapital hielt, das mit Auflösung der Treuhandanstalt zum 31. Dezember 1994 auf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übergegangen ist.

1. In welcher Höhe hatte die Deutsche Kreditbank AG Kredite von der Staatsbank der ehemaligen DDR übernommen?

Die Antwort wurde namens der Bundesregierung mit Schreiben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vom 23. März 1995 übermittelt.

Die Drucksache enthält zusätzlich – in kleinerer Schrifttype – den Fragetext.

Laut Eröffnungsbilanz der Deutschen Kreditbank AG per 1. April 1990 wurden von der Staatsbank der ehemaligen DDR übernommen:

Art	Betrag (in Mrd. Mark der DDR)
Kredite an die Wirtschaft	188,0
Kredite für den Wohnungsneubau	61,1
Kredite für den Bau staatlicher Einrichtungen	10,4
Gesamt	259,5

2. Welchen Kreditbestand hatte die Deutsche Kreditbank AG zum 31. Dezember 1994 in ihrer Bilanz ausgewiesen?

Die Bilanz der Deutschen Kreditbank AG zum 31. Dezember 1994 wird voraussichtlich im dritten Quartal 1995 festgestellt. Daher läßt sich diese Frage zur Zeit nicht beantworten.

3. Wie hoch war der Kreditbestand in der Gruppe
- Treuhand-Unternehmen,
 - Nicht-Treuhand-Unternehmen,
 - kommunaler Wohnungsbau,
 - genossenschaftlicher Wohnungsbau,
 - Kredite für den Bau gesellschaftlicher Einrichtungen
- zum 1. Juli 1990, zum 31. Dezember 1990 und zum 31. Dezember 1994 gewesen?

Der Kreditbestand entwickelte sich in den einzelnen Gruppen wie folgt:

Art	1. 7. 1990 (Mrd. DM)	31. 12. 1990 (Mrd. DM)
Treuhand-Unternehmen	67,8	64,6
Nicht-Treuhand-Unternehmen	3,3	2,9
kommunaler Wohnungsbau	17,3	17,9
genossenschaftlicher Wohnungsbau	12,7	13,3
Kredite für den Bau gesellschaftlicher Einrichtungen	5,0	5,2

Angaben für den 31. Dezember 1994 sind derzeit nicht möglich (siehe Antwort zu Frage 2).

4. In welchem Umfang wurden bis zum 31. Dezember 1994 Wertberichtigungen auf Forderungen an Kunden gebildet?

Siehe Antwort zu Frage 2.

5. Wurden Kredite für den kommunalen und genossenschaftlichen Wohnungsbau sowie Kredite zum Bau gesellschaftlicher Einrichtungen wertberichtigt?
Wenn ja, in welchem Umfang?
Wenn nein, warum nicht?

Siehe Antwort zu Frage 2.

6. In welcher Höhe konnte die Bank bis zum 31. Dezember 1994 Zinsüberschüsse erwirtschaften?

Siehe Antwort zu Frage 2.

7. In welcher Höhe hatte die Bank in der DM-Eröffnungsbilanz Eigenkapital ausgewiesen?

Die Höhe des ausgewiesenen Eigenkapitals in der DM-Eröffnungsbilanz betrug 5 586 235 620,00 DM.

8. Wurde die Struktur des Eigenkapitals bis zum 31. Dezember 1994 verändert?
Wenn ja, wie oft und mit welcher Begründung?

Siehe Antwort zu Frage 2.

9. Wie entwickelte sich das Eigenkapital durch Zu- und Abführungen bis zum 31. Dezember 1994?

Siehe Antwort zu Frage 2.

10. Trifft es zu, daß Eigenkapital zugunsten des Bundeshaushalts abgeführt wurde?
Wenn ja, wann und in welcher Höhe?

Nein.

11. In welchen Publikationen und mit welcher Begründung wurde die Deutsche Kreditbank AG zum Verkauf ausgeschrieben?

Die Privatisierung der DKB wurde am 30. August 1994 durch eine Pressekonferenz der Treuhandanstalt in Berlin eingeleitet. Die Pressekonferenz fand in der gesamten deutschen Wirtschaftspresse ein breites Echo und umfangreiche Artikel berichteten am folgenden Tage über die in der Pressekonferenz gemachten Angaben.

Des Weiteren sind am 31. August 1994 von der Investmentbank Salomon Brothers persönliche Anschreiben einschließlich Informationsmaterialien über die DKB an mit der Treuhandanstalt abgestimmte Adressaten versandt worden. Anschreiben wurden an 16 Kreditinstitute im Inland und an elf Kreditinstitute im Ausland gerichtet.

12. Wurden auch Grundstücke und Gebäude zum Verkauf angeboten?
Wenn ja, wie viele und zu welchem Preis?

Nein.

Der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AG war ein sogenannter „share deal“, d. h. es wurden die Aktien zum Verkauf angeboten.

13. Wie viele Interessenten bekundeten ihr Kaufinteresse?

Auf Grundlage der an die kontaktierten Adressaten versandten Informationsunterlagen hatten zunächst sechs deutsche Kreditinstitute schriftlich ihr unverbindliches Interesse an einem Erwerb der DKB bekundet.

14. Mit wie vielen Interessenten wurde verhandelt?

Nach einer Auswertung der Qualität der eingegangenen Interessenbekundungen wurden mit vier Parteien weitergehende Gespräche über einen Erwerb der DKB geführt.

15. Trifft es zu, daß sich die Unterzeichnung des Kaufvertrags mit dem Übergang der Zuständigkeit von der Treuhandanstalt auf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verzögerte?
Wenn ja, warum?

Der Bund wurde gemäß § 2 Abs. 4 der Verordnung zur Übertragung von unternehmensbezogenen Aufgaben und Unternehmensbeteiligungen der Treuhandanstalt vom 20. Dezember 1994 (BGBl. I S. 3910) zum 1. Januar 1995 Eigentümer der Deutschen Kreditbank AG. Zu diesem Zeitpunkt lag bereits ein von der Treuhandanstalt und der Bayerischen Landesbank paraphierter Kaufvertrag vor. Dieser wurde in einigen Punkten noch überarbeitet und anschließend unterzeichnet. Ein meßbarer Verzögerung

zungseffekt ist dadurch nicht eingetreten, weil auch zu Zeiten der Treuhandanstalt als Anteilseignerin ein derartiger Unternehmenskaufvertrag der Genehmigung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bedurft hätte.

16. In welcher Höhe hat die Bayerische Landesbank Kreditforderungen der DKB erworben?

Die Bayerische Landesbank hat mit dem Kaufvertrag keine Kreditforderungen, sondern die Aktien der DKB erworben.

17. Für welchen Betrag hat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ie Deutsche Kreditbank AG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veräußert?

Der Kaufpreis setzt sich aus einer Eigenkapitalkomponente und einer „Good-will“-Komponente zusammen.

Weitere Angaben, insbesondere zur Höhe des Kaufpreises, sind der Bundesregierung verwehrt, weil sie als Vertragspartei laut Kaufvertrag verpflichtet ist, Stillschweigen über die einzelnen Regelungen des Vertrages zu wahren.

18. In welchem Einzelplan und an welcher Haushaltsstelle des Bundeshaushalts 1995 wird dieser Verkaufserlös etatisiert?

Für die Einnahmen aus Veräußerungserlösen, u. a. aus der Privatisierung der Deutsche Kreditbank AG, ist im Haushaltsentwurf 1995 im Kapitel 08 02 der Titel 133 01 ausgebracht worden.

문서 번호 68

협동조합의 매각

1995 년 10 월 13 일

담당자 / 기관: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lt Faltlha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Gerald Thalheim (SPD)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 탈하임 사민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연방재무부 차관 쿠어트
팔트호이저가 답한 것으로 탈하임의원이 제출한 질의서 대한 답이다. 그는 독일신용은행이
농업의 구채무를 상환하라고 막데부르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645

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9. Oktober 1995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Verzeichnis der Fragenden

<i>Abgeordnete</i>	<i>Nummer der Frage</i>	<i>Abgeordnete</i>	<i>Nummer der Frage</i>
Andres, Gerd (SPD)	71, 72	von Larcher, Detlev (SPD)	39, 40
Burchardt, Ursula (SPD)	108, 109	Dr. Luft, Christa (PDS)	21, 22
Bury, Hans Martin (SPD)	65	Matthäus-Maier, Ingrid (SPD)	103
Caspers-Merk, Marion (SPD)	110, 111	Mehl, Ulrike (SPD)	134, 135
Conradi, Peter (SPD)	125	Müller, Michael (Düsseldorf) (SPD)	126, 127
Erler, Gernot (SPD)	14, 15, 16, 17	Dr. Pick, Eckhart (SPD)	41, 42
Follak, Iris (SPD)	66	Poß, Joachim (SPD)	43, 44
Frankenhauser, Herbert (CDU/CSU)	18, 19	Purps, Rudolf (SPD)	45
Fuchtel, Hans-Joachim (CDU/CSU)	89, 90, 91, 92	Rehbock-Zureich, Karin (SPD)	104, 105
Gloser, Günter (SPD)	25, 26, 27, 28	Saibold, Halo (BÜNDNIS 90/DIE GRÜNEN)	23, 46
Grotz, Claus-Peter (CDU/CSU)	77, 78, 79	Schild, Horst (SPD)	47, 48
Häfner, Gerald (BÜNDNIS 90/DIE GRÜNEN)	80, 81	Schmidt, Dagmar (Meschede) (SPD)	49, 50
Dr. Hauchler, Ingomar (SPD)	132, 133	Schönberger, Ursula (BÜNDNIS 90/DIE GRÜNEN)	117, 118, 119, 120
Dr. Hendricks, Barbara (SPD)	29, 30	Schreiner, Ottmar (SPD)	24, 51
Heubaum, Monika (SPD)	82, 83, 84, 85	Schwanhold, Ernst (SPD)	88
Iwersen, Gabriele (SPD)	86, 87	Sielaff, Horst (SPD)	121, 122, 123
Jäger, Renate (SPD)	73, 74, 75, 76	Spiller, Jörg-Otto (SPD)	52, 53
Dr. Jobst, Dionys (CDU/CSU)	93, 94, 95	Steenblock, Rainer (BÜNDNIS 90/DIE GRÜNEN)	54
Dr. Jüttner, Egon (CDU/CSU)	96, 97, 98	Stiegler, Ludwig (SPD)	5, 106, 107
Kastning, Ernst (SPD)	124	Tauss, Jörg (SPD)	128
Klemmer, Siegrun (SPD)	99, 100	Dr. Thalheim, Gerald (SPD)	55, 56, 57, 58
Körper, Fritz Rudolf (SPD)	20	Thiele, Carl-Ludwig (F.D.P.)	59, 60
Dr. Köster-Loßack, Angelika (BÜNDNIS 90/DIE GRÜNEN)	112, 113, 114	Vergin, Siegfried (SPD)	61
Kressl, Nicolette (SPD)	31, 32	Vosen, Josef (SPD)	6, 7, 8, 9
Kröning, Volker (SPD)	1, 2, 3, 4	Warnick, Klaus-Jürgen (PDS)	129, 130, 131
Krüger, Thomas (SPD)	33, 34, 35, 36	Weißgerber, Gunter (SPD)	62, 63, 64
Kubatschka, Horst (SPD)	101, 102, 115, 116	Weisskirchen, Gert (Wiesloch) (SPD)	10, 11, 12, 13
Kuhlwein, Eckart (SPD)	37, 38	Wright, Heidemarie (SPD)	67, 68, 69, 70

58. Abgeordneter
Dr. Gerald Thalheim
(SPD)
- Welche Konsequenzen zieht die Bundesregierung aus dem Urteil des Landgerichts Magdeburg, welches eine Klage der Deutschen Genossenschaftsbank auf Rückzahlung von landwirtschaftlichen Altschulden mit der Begründung zurückgewiesen hat, die Deutsche Genossenschaftsbank könne die Rechtmäßigkeit der in den letzten Wochen der DDR erfolgte Übernahme der Genossenschaftsbank Berlin (GGB) und die damit verbundene Übernahme der landwirtschaftlichen Altschulden nicht belegen, weil entscheidende Unterschriften einschließlich Dienstsiegel auf dem Genehmigungsdokument der letzten DDR-Regierung zu der Übernahme fehlen, und wie hat die Bundesregierung die fehlende rechtswirksame Genehmigung bei ihrer Überprüfung der Übernahme nach dem 3. Oktober 1995 gewürdigt?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Kurt Falthäuser vom 9. Oktober 1995

Die Bundesregierung ist an dem Prozeß nicht beteiligt. Die Ansicht des Landgerichts Magdeburg, von der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aus der Presse und der anschließenden Berichterstattung der Deutschen Genossenschaftsbank Kenntnis erlangt hat, wird von der Bundesregierung nicht geteilt.

Das Urteil steht in Widerspruch zu den bisherigen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s, der die Rückzahlungsverpflichtung der Schuldner von Altkrediten bestätigt hat. Die nach der Satzung der GGB erforderliche Zustimmung war an keine bestimmte Form gebunden. Sie wurde durch das Ministerium der Finanzen der damaligen DDR schriftlich erteilt. Auch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war vor der Unterzeichnung von der bevorstehenden Übertragung informiert und hatte seine grundsätzliche Zustimmung signalisiert. Die Überprüfung der Einzelheiten nach dem 3. Oktober 1990 gab ebenfalls keinen Anlaß, an der formellen Korrektheit und der materiellen Zweckmäßigkeit des Gesamtvorgangs zu zweifeln.

59. Abgeordneter
Carl-Ludwig Thiele
(F.D.P.)
- Welche Ebenen der Finanzverwaltung beschäftigen sich mit der Einheitsbewertung, und wie viele Planstellen bestehen dafür einschließlich der entsprechenden Arbeitsgruppen und Beiräte?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Kurt Falthäuser vom 9. Oktober 1995

Nach der Kompetenzordnung des Grundgesetzes obliegt die Einheitsbewertung des inländischen Grundbesitzes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s Vermögen und Grundvermögen) den Landesfinanzverwaltungen. Die Landesfinanzverwaltungen sind dreistufig aufgebaut. Zuständig für die Feststellung der Einheitswerte sind die Finanzämter (örtliche Landesfinanzbehörden). Die Oberfinanzdirektionen (Mittelbehörden) und Finanzministerien der Länder (oberste Landesfinanzbehörden) üben die Fach- und Dienstaufsicht über die ihnen nachgeordneten Finanzbehörden aus.

문서 번호 69

신연방주의 구채무 청산에 관한 연방감사원의 입장에 관하여

1995 년 11 월 10 일

담당자 / 기관: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urt Faltthäuser;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Wieland Sorge (SPD);
Bundesrechnungshof; Deutscher Bundestag

내용:

1995 년에 연방감사원은 통일 이후 동독의 구채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하였다.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빌란트 조르게 사민당의원이 연방감사원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가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은행과 신용체계를 서독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자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동독지역의 기업이 생산의 효율성이 높지 못하고 구매자들이 대금을 정확히 지불하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자부담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였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980

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6. November 1995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Verzeichnis der Fragenden

<i>Abgeordnete</i>	<i>Nummer der Frage</i>	<i>Abgeordnete</i>	<i>Nummer der Frage</i>
Adler, Brigitte (SPD)	72, 73	von Larcher, Detlev (SPD)	26
Beucher, Friedhelm Julius (SPD)	10, 11	Lörcher, Christa (SPD)	59, 60
Bindig, Rudolf (SPD)	74	Löwisch, Sigrun (CDU/CSU)	66, 103
Büttner, Hans (Ingolstadt) (SPD)	52, 53, 58	Dr. Lucyga, Christine (SPD)	27, 28
Bury, Hans Martin (SPD)	12, 99, 100, 101	Mante, Winfried (SPD)	61, 62, 63
Dr. Däubler-Gmelin, Herta (SPD)	1, 2	Marx, Dorle (SPD)	29, 30, 31
Deichmann, Christel (SPD)	13, 48, 49	Matschie, Christoph (SPD)	9
Duve, Freimut (SPD)	54, 55	Matthäus-Maier, Ingrid (SPD)	85
Erler, Gernot (SPD)	5, 6	Neumann, Volker (Bramsche) (SPD)	32, 33, 34, 35
Ernstberger, Petra (SPD)	75, 76	Dr. Pick, Eckhart (SPD)	102
Fuchs, Anke (Köln) (SPD)	14, 15	Schaich-Walch, Gudrun (SPD)	67
Fuchtel, Hans-Joachim (CDU/CSU)	56, 57	Scheffler, Siegfried (SPD)	86, 87, 88, 89
Ganseforth, Monika (SPD)	77, 78	Schily, Otto (SPD)	36, 37, 38, 39
Gansel, Norbert (SPD)	79	Schlauch, Rezzo (BÜNDNIS 90/DIE GRÜNEN)	40, 41, 42, 43
Graf, Angelika (Rosenheim) (SPD)	80, 81	Schmidbauer, Horst (Nürnberg) (SPD)	68
Hacker, Hans-Joachim (SPD)	16, 17, 18	Schütz, Dietmar (Oldenburg) (SPD)	50
Imhof, Barbara (SPD)	82, 83, 84	Sielaff, Horst (SPD)	69
Dr.-Ing. Jork, Rainer (CDU/CSU)	19	Sorge, Wieland (SPD)	44, 45
Kastner, Susanne (SPD)	64, 65	Spiller, Jörg-Otto (SPD)	46
Körper, Fritz Rudolf (SPD)	7, 8	Steen, Antje-Marie (SPD)	70
Dr. Köster-Loßack, Angelika (BÜNDNIS 90/DIE GRÜNEN)	91, 92, 93, 94	Stiegler, Ludwig (SPD)	47
Kressl, Nicolette (SPD)	20, 21	Weisheit, Matthias (SPD)	3, 4, 51, 71
Kubatschka, Horst (SPD)	95, 96, 97, 98	Willner, Gert (CDU/CSU)	90
Kurzhal, Christine (SPD)	22, 23, 24, 25		

Verzeichnis der Fragen nach Geschäftsbereichen der Bundesregierung

Seite	Seite
Geschäftsbereich des Auswärtigen Amtes	
Dr. Däubler-Gmelin, Herta (SPD) Vereinbarkeit der französischen Atomversuche im Südpazifik mit dem EURATOM-Vertrag	Hacker, Hans-Joachim (SPD) Berücksichtigung des Wertes der beim Verkauf ehemaliger DDR-Banken mitveräußerten Immobilien bei Festsetzung des Kaufpreises
1	7
Weisheit, Matthias (SPD) Intervention gegen den Bürgerkrieg in Sierra Leone	Dr.-Ing. Jork, Rainer (CDU/CSU) Steuerliche Absetzbarkeit der Ausbildungs- kosten bei privaten Bildungseinricht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2	8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Erler, Gernot (SPD) Aufnahme der Republik Bulgarien in die Liste der nichtvisapflichtigen Länder der Europäischen Union	Kressl, Nicolette (SPD) Unterschiedliche Handhabung von Kinderfreibetrag und Kindergeld
2	9
Körper, Fritz Rudolf (SPD) Quantitative Analyse bezüglich der Ver- fahrensdauer von Asylbewerbungen und -klagen vor und nach der Asylrechtsreform	Kurzhals, Christine (SPD) Vermögensnachteile des Bundes durch die vom Bundesrechnungshof festgestellten Mängel beim Verkauf ehemaliger DDR-Banken
3	10
Matschie, Christoph (SPD) Kooperation der GSG 9 mit der Nationalpolizei in Nicaragua	von Larcher, Detlev (SPD) Bundesstaatlicher Finanzausgleich für die neuen Länder nach der neuesten Steuer- schätzung für 1995 und 1996 und im Vergleich zu den Schätzungen im Zusammenhang mit den Solidar- pakt-Verhandlungen
4	11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Beucher, Friedhelm Julius (SPD) Kritik des Bundesrechnungshofes am Verfahren beim Verkauf der Berliner Stadtbank AG an die Berliner Bank AG	Dr. Lucyga, Christine (SPD) Vorgänge bei der Privatisierung und Liquidierung der BBB Bagger-Bugsier- und Bergungsreederei GmbH, Rostock
5	12
Bury, Hans Martin (SPD) Steuermindereinnahmen aufgrund der im EStG ausgesprochenen Steuerbefreiung für Zinsen und Kapitalerträge aus Versicherungen seit 1991	Marx, Dorle (SPD) Abwicklung der Altschuld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oppelte Zinsleistungen an Banken
5	12
Deichmann, Christel (SPD) Vorbehalte des EU-Kommissars gegenüber der Aufnahme einer Ausnahmeregelung in die EU-Mehrwertsteuerrichtlinie	Neumann, Volker (Bramsche) (SPD) Ungerechtfertigte Konvertierung der Transferrubel und ihre strafrechtliche Ermittlung
6	14
Fuchs, Anke (Köln) (SPD) Berücksichtigung des Standorts Bonn bei den Überlegungen zur Zusammenlegung der Zoll- und Verbrauchsteuerabteilungen der Oberfinanzdirektionen Köln und Düsseldorf	Schily, Otto (SPD) Verkauf von Banken der ehemaligen DDR
6	15
	Schlauch, Rezzo (BÜNDNIS 90/DIE GRÜNEN) Steuerausfall durch Transfers der Einnahmen aus Sport- und Unterhaltungsveranstaltun- gen ins Ausland, u. a. wie im Fall Graf
	17
	Sorge, Wieland (SPD) Feststellungen des Bundesrechnungshofes zur Abwicklung der Altschuld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nstieg der Konkurse angesichts der hohen Zinsbelastungen
	19

bei Einnahmen aus Lizenzen Oberlizenzen steuerunschädlich weiterleiten können, sofern sie bestimmte Prozentsätze der Einnahmen (von 2% bis 6% je nach Höhe der Einnahmen) versteuern. Die Empfänger, an die die Lizenzeneinnahmen weitergeleitet werden, sind in der Regel Gesellschaften mit Sitz auf den niederländischen Antillen. Bei den niederländischen sog. Ruling-Gesellschaften ist zu prüfen, ob ihnen die Abkommensvorteile nach § 50 d Abs. 1 a EStG versagt werden können.

Das niederländische Finanzministerium hat im übrigen auf Anfrage mitgeteilt, daß die Annahme, niederländische Steuerbeamte würden Personen aus dem Bereich des Sports und der Unterhaltung „bei steuerschädlichen und den Steuergesetzen zuwiderlaufenden Konstruktionen“ helfen, abwegig sei.

- | | |
|--|---|
| <p>43. Abgeordneter
Rezzo Schlauch
(BÜNDNIS 90/
DIE GRÜNEN)</p> | <p>Warum beruft sich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auf das Steuergeheimnis, wenn es um die Beantwortung von Kleinen Anfragen über das Verwaltungshandeln im Fall Graf (z. B. Drucksache 13/2308) geht, während er in der Sitzung des Finanzausschusses am 26. Oktober 1995 zur in der o. g. Kleinen Anfrage gestellten Frage der Kontakte zwischen Bundesamt für Finanzen und den baden-württembergischen Steuerbehörden bereitwillig Auskunft erteilt?</p> |
|--|---|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Kurt Fallthauer vom 6. November 1995

Durch die in der Sitzung des Finanzausschusses am 26. Oktober 1995 verteilte Presseverlautbarung des Finanzministeriums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war hinsichtlich des Steuergeheimnisses eine neue Lage eingetreten. Aufgrund der Presseverlautbarung, durch die in der Öffentlichkeit verbreitete unwahre Tatsachen, die geeignet sind, das Vertrauen in die Verwaltung erheblich zu erschüttern, richtiggestellt worden sind (vgl. § 30 Abs. 4 Nr. 5 AO), waren die darin genannten Tatsachen offenkundig geworden. Offenkundige Tatsachen unterliegen nicht mehr dem Steuergeheimnis.

- | | |
|--|---|
| <p>44. Abgeordneter
Wieland Sorge
(SPD)</p> | <p>Wie reagiert die Bundesregierung auf die Feststellung des Bundesrechnungshofes, wonach durch die Zwischenschaltung privater Banken zur Abwicklung von Altschulden ehemaliger DDR-Betriebe die Zinsbelastungen so in die Höhe getrieben wurden, daß der wirtschaftliche Aufbauprozeß in den neuen Ländern beeinträchtigt wurde und auch heute noch beeinträchtigt wird?</p> |
| <p>45. Abgeordneter
Wieland Sorge
(SPD)</p> | <p>Haben diese hohen Zinsbelastungen auch zu der ständig steigenden Anzahl von Konkursen in den neuen Ländern beigetragen?</p> |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Kurt Falthäuser
vom 6. November 1995**

Vorbemerkung

Die Bundesregierung wird vor dem Rechnungsprüfungsausschuß des Deutschen Bundestages zu allen in dem Bericht aufgeworfenen Fragen und Wertungen des Bundesrechnungshofes im Einzelfall ausführlich Stellung nehmen:

Zu Frage 44

Die Bundesregierung ist nicht der Auffassung, daß der wirtschaftliche Erholungsprozeß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urch die mit der Umstellung des planwirtschaftlichen Banken- und Kreditsystems der früheren DDR auf die bundesdeutsche Marktwirtschaft verbundenen Zinsfragen negativ beeinflusst wurde.

Zu Frage 45

Es liegen eine Reihe von Untersuchungen vor, die sich mit der Finanzsituation der Unternehm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schäftigen und Ursachen für Probleme ostdeutscher Unternehmen analysieren.

- Das 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Berlin, da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und das Institut für Weltwirtschaft an der Universität Kiel erstellen regelmäßig Gutachten zu den „Gesamtwirtschaftlichen und unternehmerischen Anpassungsfortschritten in Ostdeutschland“. In ihrem letzten Bericht vom Juli 1995 werden ostdeutsche Industrieunternehmen nach ihren Problemen befragt. Dabei werden eine Vielzahl von Gründen für eine finanzielle Anspannung genannt, insbesondere die noch immer unzureichende Rentabilität der Produktion, die schlechte Zahlungsmoral der Kunden und die kräftigen Lohnsteigerungen. Die Altschulden und eine daraus resultierende Zinsbelastung werden von den Unternehmen nicht als Problem angesprochen.
- Das Ifo-Institut, München, und da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haben im vergangenen Jahr ein Gutachten erstellt zum Thema „Finanzierungsprobleme kleiner und mittlerer Unternehm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ch diese Untersuchung kommt zu dem Ergebnis, daß Altschulden nur bei wenigen Unternehmen überhaupt, und wenn, dann nur eine nachgeordnete Rolle spielen bei den Finanzierungsproblemen der Unternehmen.

Zinsbelastungen können die Zahl der Konkurse allenfalls marginal beeinflussen, denn die Konkursgründe, Zahlungsunfähigkeit oder Überschuldung, hängen von der Höhe der Gesamtverbindlichkeiten eines Schuldners ab. Zinsforderungen haben davon naturgemäß nur einen sehr geringen Anteil.

46. Abgeordneter
**Jörg-Otto
Spiller**
(SPD)

Welcher jährliche Steuerausfall würde sich rein rechnerisch ergeben, wenn der Vorschlag von Bundesminister Dr. Klaus Töpfer, für den Bereich der Innenstädte in Ost- und Westdeutschland Sonderabschreibungen von bis zu 50% zu gewähren, umgesetzt würde, und wie beurteilt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iesen Vorschlag?

문서 번호 70

동독의 구채무 - 연방의회 질의와 응답

1995 년 11 월 29 일

담당자 / 기관: Deutscher Bundestag;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Jürgen Stark; Abgeordnete des Deutschen Bundestages; Bundesrechnungshof; Deutsche Kreditbank; Bayerische Landesbank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의원들이 제출한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의 유르겐 슈타르크 재무차관이 답변한 것이다. 이 질의는 동독의 구채무와 동독 금융기관을 서독의 시중은행이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연방감사원이 1995 년 9 월 27 일에 작성한 보고서에 관한 것이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는 1995 년 10 월 11 일에 연방의회 예산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증권법과 신용기관법에서 규정한 정보 비공개원칙 때문에 슈타르크차관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답변할 수 있었다. 연방감사원이 해당은행의 동의 하에서만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독일신용은행주식회사를 인수하려는 금융기관이 별로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바이에른 주립은행이 선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슈타르크차관은 나아가 1990 년 10 월 3 일 이전에 동서독 은행 간에 체결된 계약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당시에 연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방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매각과정이 은행에게 유리하고 공공예산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슈타르크차관은 이러한 비판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독 은행들이 구동독에서의 업무를 위한 건물을 짓고 인력을 훈련하는 것과 같이 인프라구축에 많은 투자를 했어야만 했다고 하였다. 구동독지역의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인력이 약 두 배 증가하였다. 동독 은행의 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은 총 110 억 DM 이었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 13. Wahlperiode, 73. Sitzung, Bonn, 29.11.1995

- (A) **Dr. Dagmar Enkelmann (PDS):** Herr Präsident, selbst auf die Gefahr hin, daß ich mir jetzt eine Rüge einhandle: Die Antworten, die vorhin die Bundesregierung gegeben hat, waren wenig hilfreich und sehr unverbindlich.
- Jetzt zu meiner Frage: Sie haben gerade über den Haushalt 1996 gesprochen. Trotzdem bleibt meine Frage: Wie wird nach dem Verkauf von Anteilen an den Genossenschaften der im allgemeinen Eisenbahngesetz vereinbarte und gesetzlich festgehaltene Besitzstand gesichert?
- Manfred Carstens, Parl.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für Verkehr:** Ja.
- Dr. Dagmar Enkelmann (PDS):** „Wie“ habe ich gefragt.
- Manfred Carstens, Parl.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für Verkehr:** Der Besitzstand ist gegeben, und der wird nicht angerührt. Den brauchen wir nicht irgendwie zu sichern, sondern der wird nicht angerührt.
- Vizepräsident Hans Klein:** Zweite Zusatzfrage.
- Dr. Dagmar Enkelmann (PDS):** Der Zeitschrift „GdED in Form“ – also der Zeitschrift der Eisenbahnergewerkschaft –, 10/95, konnte ich die Information entnehmen, daß Staatssekretär Henke nach einem Gespräch unter anderem mit Herrn Schäfer festgehalten hat, daß man übereingekommen sei, daß alle weiteren Fragen, unter anderem auch in bezug auf die Wohnungen, nur im Einvernehmen mit der GdED zu regeln seien.
- (B) Meine Frage ist jetzt: Wie ist die Gewerkschaft der Eisenbahner in die Überlegungen der Bundesregierung, die ja sehr plötzlich auf den Tisch des Haushaltsausschusses gekommen sind, einbezogen worden?
- Manfred Carstens, Parl.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für Verkehr:** Die Einzelheiten dessen, wie die Gespräche abgelaufen sind, und die Termine habe ich im Moment nicht parat. Der Minister hat bestätigt und zugesagt, daß es auch in Zukunft eine sehr enge Abstimmung geben soll. Ich will Ihnen aber gerne mitteilen, damit Sie das auch schriftlich haben, welche Gespräche es bislang gegeben hat und wie der weitere zeitliche Ablauf geplant ist.
- Vizepräsident Hans Klein:** Werden dazu weitere Zusatzfragen gestellt? – Das ist nicht der Fall.
- Dann, Herr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danke ich mich für die Beantwortung der Fragen.
- Ich rufe den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auf.
- Ich sage jetzt hauptsächlich für das Protokoll, daß alle Fragen dieses Geschäftsbereichs, also die Fra-
- gen 21 und 22 des Abgeordneten Kubatschka sowie die Fragen 23 und 24 der Abgeordneten Kastner schriftlich beantwortet werden sollen. Die Antworten werden als Anlagen abgedruckt.
- (C) Wir kommen dann zu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Die Fragen 25 und 26 der Abgeordneten Hendricks sind zurückgezogen. Frage 27 der Abgeordneten Uta Titze-Stecher soll schriftlich beantwortet werden. Die Antwort wird als Anlage abgedruckt.
- Ich rufe den Geschäftsbereich des Auswärtigen Amtes auf. Auch hier sollen die Fragen 28 von Norbert Gansel, 29 und 30 von Dr. Elke Leonhard sowie 31 und 32 von Amke Diertert-Scheuer schriftlich beantwortet werden. Die Antworten werden ebenfalls als Anlagen abgedruckt.
- Wir kommen zu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Die Fragen 33 von Dr. Egon Jüttner, 34 von Norbert Gansel, 35 von Jürgen Augustinowitz und 36 von Manfred Such sollen wiederum schriftlich beantwortet werden. Die Antworten werden als Anlagen abgedruckt.
- Ich rufe den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auf. Zur Beantwortung steht uns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zur Verfügung.
- Die Frage 37 unserer Kollegin Dr. Christine Lucyga soll auf Grund von Nr. 2 Abs. 2 unserer Richtlinien für die Fragestunde schriftlich beantwortet werden. Die Antwort wird als Anlage abgedruckt.
- (D) Ich rufe jetzt die Frage 38 auf, ebenfalls gestellt von Frau Dr. Lucyga:
- Welche Gründe waren für die Bundesregierung oder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dafür maßgebend, daß beim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die in der Bilanz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usgewiesenen kommunalen Altschulden ausgeklammert wurden und die Abwicklung der Altschulden – abweichend vom Verfahren bei früheren Verkäufen von ehemaligen Banken der DDR an westdeutsche Banken – der vom Bund gegründeten Gesellschaft für kommunale Altkredite und Sonderaufgaben für Währungsumstellung mbH (GAW) übertragen wurde, und wie wirkte sich dies auf den Kaufpreis aus?
- Wenn ich Sie richtig verstanden habe, Herr Staatssekretär, wollen Sie zu dieser oder einer Reihe anderer Fragen zunächst eine einleitende Bemerkung machen. Bitte sehr, Herr Staatssekretär.
-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Präsident, vielen Dank. – Die Fragen 38 bis 61 betreffen zu einem Großteil die **Abwicklungen von Altkrediten der ehemaligen DDR und die Übernahme von Geschäften ehemaliger DDR-Kreditinstitute durch andere Geschäftsbanken.** Dies ist ein Sachbereich, zu dem der Bundesrechnungshof einen umfangreichen schriftlichen Bericht mit Datum vom 27. September 1995 erstellt hat.
- Dieser Bericht wurde mit Schreiben vom 11. Oktober 1995 an den Vorsitzenden des Haushaltsaussch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gerichtet. Dieser Bericht des Bundesrechnungshofs enthält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 (A) vertrauliche Geschäftsdaten, die der Verschwiegenheitspflicht gemäß § 395 des Aktiengesetzes und § 9 des Kreditwesengesetzes unterliegen.

Der Bundesrechnungshof hat diese Vertraulichkeitseinstufung von sich aus vorgenommen. Dennoch wurde in der Presse über diesen Bericht und über einzelne Elemente daraus ausführlich berichtet, wobei in der Öffentlichkeit ein unzutreffendes Bild von den Bemerkungen des Bundesrechnungshofes vermittelt wurde.

Nach einer ersten Erörterung dieses Berichts in der Arbeitsgruppe „Aufbau Ost“ des Haushaltsausschusses in der vergangenen Woche wird die Bundesregierung vor dem Haushaltsausschuß oder dem Rechnungsprüfungsausschuß des Deutschen Bundestages zu allen in dem Bericht aufgeworfenen Fragen und Wertungen im Einzelfall ausführlich Stellung nehmen.

Auch wenn der Bericht Grundlage für Presseberichte war, sehe ich mich nicht in der Lage, die vom **Bundesrechnungshof** erbetene **Vertraulichkeit** aufzuheben. Dies kann nur der Bundesrechnungshof tun. Nur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und mit Zustimmung der betroffenen Banken kann eine Aufhebung der Vertraulichkeit erfolgen.

- (B) Deshalb – das habe ich auch in der Arbeitsgruppe „Aufbau Ost“ deutlich gemacht – sollte der Vorsitzende des Haushaltsausschusses – er ist der Adressat des Bundesrechnungshofberichts – an den Bundesrechnungshof in dieser Sache herantreten. Gleichwohl werde ich von meiner Seite aus dem Bundesrechnungshof empfehlen, mit einer entsprechenden Bitte an die Banken heranzutreten, so daß der Bericht in den Ausschüssen ohne Vertraulichkeitseinstufung behandelt werden könnte.

Herr Präsident, ich mußte diese Vorbemerkung machen, weil einzelne Fragen, die ich jetzt im folgenden beantworten werde, nur pauschal beantwortet werden können, um Geschäfts- und Betriebsgeheimnisse nicht zu verletzen.

Ich komme zur Frage 38. Im Sommer 1994 wurde die DKB international zum **Verkauf** ausgeschrieben. Zum Verkaufszeitpunkt war der größte Anteil des Kreditvolumens der **Deutschen Kreditbank AG** im Bereich Wohnungsbaukredite. Die Kreditnehmer waren in der Regel Wohnungsbaugesellschaften, die sich wiederum im Eigentum von Kommunen befanden.

Für private Investoren war eine Bank nicht attraktiv, die einerseits um Kunden wirbt, auf die die Kommunen bestimmenden Einfluß haben, und andererseits die sogenannten Altschulden für den Bau gesellschaftlicher Einrichtungen geltend machen muß.

Der Unternehmenswert der Deutschen Kreditbank wurde durch die **Ausgliederung der Altkredite** positiv beeinflusst. Dies zeigt auch der Umstand, daß ein Goodwill erlöst werden konnte.

Vizepräsident Hans Klein: Zusatzfrage, Frau Kollegin. (C)

Dr. Christine Lucyga (SPD): Herr Staatssekretär, Ihre Antwort kann mich naturgemäß nicht ganz befriedigen. Ich habe konkret gefragt: Welche Gründe waren für die Ausgliederung der kommunalen Altschulden beim Verkauf der Kreditbank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maßgebend? Das halte ich mit Ihren Ausführungen für nicht zureichend beantwortet. Welche Gründe waren es? Geschah es auf Verlangen des Verkäufers oder des Käufers? Sagen Sie es mir bitt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s gab eine internationale Ausschreibung; darauf habe ich hingewiesen.

(Dr. Christine Lucyga [SPD]: Das haben Sie eben vorgelesen!)

Es gab sehr wenige Interessenten für diese Bank. Unter diesen mußte natürlich eine Auswahl getroffen werden, und es mußte das günstigste Angebot genommen werden. Dieses lag bei der Bayerischen Landesbank. Der entscheidende Punkt war eben – die Höhe der kommunalen Altschulden ist Ihnen ja in etwa bekannt –, daß ohne eine Ausgliederung dieser kommunalen Altschulden eine Privatisierung, ein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nicht möglich gewesen wäre.

Vizepräsident Hans Klein: Zweite Zusatzfrage. (D)

Dr. Christine Lucyga (SPD): Sie sagten, die Ausgliederung der kommunalen Altschulden habe sich auf den erzielten Verkaufswert insgesamt positiv ausgewirkt. Was verstehen Sie unter „positiv“? Ich hätte gern konkret Größenordnungen gewuß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s konnte durch die Ausgliederung ein höherer Verkaufspreis erzielt werden als ohne Ausgliederung. Sie werden Verständnis dafür haben, daß ich die Größenordnung hier nicht nennen kann. Mit der Käuferin der DKB, der Bayerischen Landesbank, ist Vertraulichkeit vereinbart worden. Ich kann hier leider keine Einzelheiten nennen.

(Dr. Christine Lucyga [SPD]: Auch nicht ungefähr?)

Vizepräsident Hans Klein: Es gibt nur zwei Zusatzfragen, wie immer Sie die dritte Zusatzfrage begründen. Aber der Staatssekretär ist schon dabei, die dritte Zusatzfrage zu beantworten, also bitt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r Kaufpreis bestand aus einer Eigenkapitalkomponente und einer Goodwillkomponente. Der Kaufvertrag sah vor, daß von der DKB nicht benötigtes Eigenkapital einschließlich des Gewinns für das Jahr 1993 vor der Übertragung an den Bund ausgeschüttet wird. Auch das Ergebnis fü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 (A) 1994 steht dem Bund zu. Es ist allerdings noch nicht festgestellt.

Insgesamt sind im Bundeshaushalt Einnahmen aus Kapitalherabsetzung und Veräußerung der Staatsbank Berlin und der DKB in Höhe von insgesamt 11 Milliarden DM veranschlagt worden. Eine nähere Aufschlüsselung ist mir leider nicht möglich, Frau Abgeordnete.

Vizepräsident Hans Klein: Bitte, Herr Kollege Catenhusen.

Wolf-Michael Catenhusen (SPD): Ich weiß nicht, ob die Frage formal richtig ist, aber ich stelle sie trotzdem: Ist es bei Veräußerung von Eigentum, das in Bundesbesitz übergegangen ist, üblich, daß Erlöse aus solchen Verkaufsvorgängen dem Parlament oder den zuständigen Fachausschüssen nicht mitgeteilt werd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über alle Vorgänge, über die wir im Laufe der nächsten Zeit hier sprechen, einschließlich des Verkaufes der DKB, ist das Parlament über die entsprechenden Ausschüsse unterrichtet word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Schily.

- (B) **Otto Schily (SPD):** Überschreitet der Verkaufserlös, der erzielt worden ist, die Grenze, bei der eine parlamentarische Genehmigung erforderlich ist?

(Albert Schmidt [Hitzhofen] [BÜNDNIS 90/DIE GRÜNEN]: Was ist das?)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Schily, diese Frage kann ich insoweit beantworten, daß ich sage, daß das Parlament, daß die Ausschüsse über diesen Punkt informiert worden sind. Das Parlament ist unterrichtet worden. Das ist nach meinem Wissen über den Haushaltsausschuß gelaufen. Es gab zu diesem Punkt eine Unterrichtung des Haushaltsausschusses.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Conradi.

Peter Conradi (SPD): Ist der Haushaltsausschuß über den beabsichtigten Verkauf der Deutschen Kreditbank AG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mit Einzelheiten und Preisen so informiert worden, wie die Bundesregierung den Haushaltsausschuß beim Verkauf von Grundstücken, Gebäuden und anderen bundeseigenen Gegenständen informier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Conradi, es geht hier darum, daß – ich habe es gesagt – mit dem

Erwerber der Deutschen Kreditbank zum Verkaufspreis Vertraulichkeit vereinbart worden ist. (C)

(Otto Schily [SPD]: Sie sind da auf völlig unsicherem Boden! Eigentümer war der Staat! Sie müssen dem Parlament und der Öffentlichkeit Auskunft geben! Sie können das parlamentarische Recht nicht durch eine Vereinbarung mit dem Käufer unterlauf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Schily, wir wollen uns an die Regeln halten. Die nächste Frage wollte der Kollege Neumann stellen. – Hat sich erledigt. Dann bitte, Frau Kollegin Matthäus-Maier.

Ingrid Matthäus-Maier (SPD): Herr Staatssekretär, es ist schwierig, die Frage zu stellen, weil Sie mehrfach geantwortet haben, das sei vertraulich. Aber sehen Sie nicht die Problematik, daß unser Haushaltsrecht detailliert vorsieht, wann und unter welchen Bedingungen der Haushaltsausschuß informiert werden muß oder sogar zustimmen muß, Sie sich aber, wenn wir Fragen stellen, immer wieder auf Vertraulichkeit berufen, so daß wir gar nicht nachprüfen können, was Sie im einzelnen mit den Banken vereinbart haben oder nicht? Es handelt sich doch um Vermö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r haben ein Recht darauf, das zu erfahr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Selbstverständlich, Frau Abgeordnete, das ist das Recht des Parlamentes. Das wird auch gar nicht angetastet. (D)

Ich möchte nur darauf hinweisen, daß das Parlament wie im Fall der DKB auch bei allen anderen Verfahren bei den Schritten, die bei der Privatisierung der DDR-Banken erfolgten, eingeschaltet war.

Vizepräsident Hans Klein: Weitere Zusatzfragen zu Frage 38 werden nicht gestellt.

Dann rufe ich die Frage 39 auf, die der Kollege Hans-Joachim Hacker gestellt hat:

Welche Vorverträge bzw. sonstigen früheren Vereinbarungen aus der Zeit vor dem 3. Oktober 1990 haben die Bundesregierung bzw.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beim Verkauf der folgenden Banken – Deutsche Kredit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bank AG – in ihrer Verhandlungsfreiheit eingeschränkt, und durch welche Punkte in diesen Vorverträgen bzw. Vereinbarungen war die Verhandlungsfreiheit eingeschränkt?

Bitte, Her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Zur **Deutschen Kreditbank AG:** Folgende verbindliche Vereinbarungen wurden in der Zeit vor dem 3. Oktober 1990 geschlossen: Vertrag der DKB mit der Deutschen Bank AG über die Gründung der Joint-venture-Bank Deutsche Bank/Kreditbank AG, Vertrag der DKB mit der Dresdner Bank AG über die Gründung der Joint-venture-Bank Dresdner Bank/Kreditbank AG, Geschäftsbesorgungsvertrag der DKB mit der Deutschen Bank/Kre-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 (A) ditbank AG betreffend die Abwicklung der Altkredite, Geschäftsbesorgungsvertrag der DKB mit der Dresdner Bank/Kreditbank AG betreffend die Abwicklung der Altkredite.

Die Deutsche Bank AG und die Dresdner Bank AG haben bereits im Sommer 1990 jeweils eine Kaufoption an den Aktien der DKB an den Joint-venture-Banken erhalten. Die DKB hatte sich gegenüber Deutscher und Dresdner Bank AG vertraglich verpflichtet, deren Beteiligung an den jeweiligen Joint-venture-Banken auf 100-Prozent-Anteile zu erhöhen. Des weiteren war der Kaufpreis zur Übernahme der Aktien an den Joint-venture-Banken vertraglich festgelegt.

Zur **Berliner Stadtbank AG**: Folgende verbindliche Vereinbarungen wurden in der Zeit vor dem 3. Oktober 1990 geschlossen: Letter of intent zwischen Berliner Bank AG und Berliner Stadtbank AG, Dienstleistungsvertrag zwischen Berliner Bank AG und Berliner Stadtbank AG.

Der Letter of intent und insbesondere der Dienstleistungsvertrag führten zu einer Vertragsbindung der Berliner Stadtbank AG dergestalt, daß ein Verkauf der Berliner Stadtbank AG an andere als die Berliner Bank AG für den Eigentümer wirtschaftlich nicht attraktiv war. Einzelheiten vermag ich mit Rücksicht auf die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 der beteiligten Banken ohne deren Einverständnis nicht anzugeben.

- (B) Ich bin bereit – das habe ich gesagt –,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an die Banken heranzutreten mit der Bitte, die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 aufzuheben, damit der Haushaltsausschuß oder der Rechnungsprüfungsausschuß die Möglichkeit hat, sich detailliert mit diesen Dingen zu befassen.

Die **Genossenschaftsbank Berlin** ist nicht verkauft worden. Vielmehr hat die DG-Bank noch vor dem Tag der deutschen Einheit am 3. Oktober 1990 das Geschäft und die Mitarbeiter der Genossenschaftsbank Berlin, die sich nach wie vor im Eigentum des Bundes befindet, übernommen, und zwar durch einen Übernahme- und Einbringungsvertrag zwischen der GBB und der DG-Bank vom 10. September 1990.

Die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hat am 31. Mai 1990 eine Grundlagenvereinbarung mit der Westdeutschen Landesbank abgeschlossen.

Zur **Deutschen Handelsbank AG**: Schon vor dem 3. Oktober 1990 hatte die Staatsbank Berlin Verhandlungen über eine Veräußerung ihrer 64prozentigen Beteiligung an der Deutschen Handelsbank AG geführt, ohne daß es zu Vorverträgen oder sonstigen Vereinbarungen gekommen war. Die Verhandlungen konnten am 13. November 1990 abgeschlossen werd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Hacker, Zusatzfrage.

Hans-Joachim Hacker (SPD): Herr Staatssekretär, waren die Bundesregierung bzw. von ihr beauftragte

Personen oder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bzw. von ihnen beauftragte Personen in irgendeiner Phase vor dem 3. Oktober 1990 an der Verhandlung oder Erstellung dieser Vorverträge oder Vereinbarungen beteiligt? Wenn ja: In welcher Funktion haben diese Personen gehandelt? (C)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wenn ich das richtig sehe, greifen Sie der nächsten Frage vor. Ich kann diese Frage aber mit Nein beantworten.

Vizepräsident Hans Klein: Zweite Zusatzfrage.

Hans-Joachim Hacker (SPD): Haben die Bundesregierung bzw.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in irgendeiner Weise unmittelbar oder mittelbar Einfluß auf die Verhandlungen oder die Erstellung dieser Vorverträge oder Vereinbarungen genommen? Wenn ja: in welcher Weis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s ist mir nicht bekannt, daß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oder Bedienstete der Bundesregierung Einfluß auf die Vertragsgestaltung genommen haben.

Vizepräsident Hans Klein: Kollege Schily.

Otto Schily (SPD): Ist Ihnen das deshalb nicht bekannt, Herr Staatssekretär, weil Sie erst seit kurzer Zeit im Amt sind? (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Nein, Herr Abgeordneter Schily, das hat das Studium der Akten ergeb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Schulz.

Werner Schulz (Berlin) (BÜNDNIS 90/DIE GRÜNEN): Herr Staatssekretär, können Sie bestätigen, daß einige westdeutsche Banken durch Geschäftsbesorgungsverträge mit den ostdeutschen Partnerbanken von diesen Entgelte erhalten haben, die in etwa den Kaufsummen bei der späteren Übernahme der ostdeutschen Partnerbanken entsprechen? Wie erklären Sie das?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das ist mir nicht bekannt.

Vizepräsident Hans Klein: Weitere Zusatzfragen werden nicht gestellt.

Dann rufe ich die Frage 40, die ebenfalls der Kollege Hacker gestellt hat, auf:

Welche Mitglieder bzw. Mitarbeiter o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und der Regierung der DDR haben an den Verhandlungen über die Abwicklung von Altkrediten der ehemaligen DDR und die Übernahme von Geschäften ehemaliger DDR-Kreditinstitute durch andere Geschäftsbanken teilgenommen?

(A)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Vor dem 3. Oktober 1990 haben keine Mitglieder bzw. Mitarbeiter o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an **Verhandlungen über die Abwicklung von Altkrediten der ehemaligen DDR und die Übernahme von Geschäften ehemaliger Kreditinstitute durch andere Geschäftsbanken** teilgenommen. Auf Grund von Ministerratsbeschlüssen der Regierung der ehemaligen DDR war vor allem die Staatsbank Berlin mit der Umstrukturierung der Kreditwirtschaft beauftragt worden. Allerdings gab es im Zusammenhang mit dem Einigungsvertrag Gespräche von Vertretern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und der Deutschen Bundesbank mit den Vertretern der DDR und der Staatsbank Berlin. Nach dem 3. Oktober 1990 lag die Zuständigkeit be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ür die DKB und für die Berliner Stadtbank AG war die Treuhandanstalt zuständig.

Vizepräsident Hans Klein: Weitere Zusatzfragen werden nicht gestellt.

Dann rufe ich die Frage 41 des Kollegen Weißberger auf. Ist der Kollege im Raum? – Das ist nicht der Fall. Es wird verfahren, wie in der Geschäftsordnung vorgesehen.

Ich rufe die Frage 42 des Kollegen Peter Conradi auf:

In welcher Höhe sind auf Ausgleichsforderungen, die Kreditinstituten seit dem 1. Juli 1990 zugeteilt wurden, Zinsen angefallen, die den Bundeshaushalt bzw. den Erblastentilgungsfonds belasten?

(B) Bitte, Her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Seit dem 1. Juli 1990 sind in Höhe von 26,7 Milliarden DM **Zinsen auf Ausgleichsforderungen** angefallen, die bis zum 31. Dezember 1994 vom Kreditabwicklungsfonds mit Erstattungen je hälftig durch den Bund bzw. die Treuhandanstalt und ab dem 1. Januar 1995 vom Erblastentilgungsfonds mit vollständiger Erstattung durch den Bund getragen wurden.

Peter Conradi (SPD): Welche Zinssätze hat die Bundesregierung für diese Forderungen maximal und minimal vereinbar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iese Forderungen werden nach dem Drei-Monats-Fibor verzinst.

(Peter Conradi [SPD]: Hui!)

Vizepräsident Hans Klein: War das Ihre zweite Zusatzfrage? – Danke. Möchte noch jemand eine Zusatzfrage stellen? – Das ist nicht der Fall.

Dann kommen wir zur Frage 43, die ebenfalls der Kollege Peter Conradi gestellt hat:

Beim Verkauf welcher der folgenden Banken bzw. ihrer Anteile haben die Bundesregierung oder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in den Kaufverträgen Nachbesserungsklauseln eingebracht: Deutsche Kredit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

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bank AG? (C)

Bitte, Her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Zur Deutschen Kreditbank AG: In den Kaufverträgen über die Aktien der Joint-venture-Banken wurden keine **Nachbewertungsklauseln** vereinbart. Bei den getrennt veräußerten Grundstücken wurden hingegen Nachbewertungsklauseln vorgesehen. Bei dem Verkauf der DKB an die Bayerische Landesbank im Jahre 1995 wurde eine Nachbewertungsvereinbarung in den Kaufvertrag aufgenommen.

Der Kaufvertrag über die Aktien der Berliner Stadtbank AG enthält keine Nachbewertungsklausel im eigentlichen Sinne, allerdings eine Anpassungsklausel betreffend Altkredite. Einzelheiten können im Hinblick – ich wiederhole das – auf die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 der an der Transaktion beteiligten Banken nicht genannt werden. Die Berliner Stadtbank AG hatte kein eigenes Grundstückseigentum.

Zu den übrigen Kreditinstituten: Die Genossenschaftsbank Berlin ist am 3. Oktober 1990 in das Eigentum des Bundes übergegangen. Sie wurde nicht verkauft. Ich habe bereits darauf hingewiesen. Ihr Bankgeschäft hat sie durch Einbringungsvertrag vom 10. September 1990 mit Wirkung vom 1. Juli 1990 in die Deutsche Genossenschaftsbank eingebracht und dafür eine angemessene Gegenleistung erhalten. Nachbesserungsklauseln wurden in den Kaufverträgen betreffend die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und die Deutsche Handelsbank AG nicht vereinbart. (D)

Vizepräsident Hans Klein: Zusatzfrage.

Peter Conradi (SPD): Der Bundesrechnungshof hat kritisiert, daß beim Verkauf des 64-Prozent-Anteils der Deutschen Handelsbank nur der Käuferin ein Recht zur Nachverhandlung oder Kaufpreisanpassung eingeräumt wurde, nicht aber der Treuhand. Es ist doch ungewöhnlich, daß nur eine Seite dieses Recht auf Nachbesserung oder Nachverhandlung hat und nicht auch die andere, in diesem Fall die Treuhan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r Vertrag über die Veräußerung der DKB wurde im Januar dieses Jahres abgeschlossen; zu diesem Zeitpunkt hat die Treuhandanstalt nicht mehr bestanden.

Peter Conradi (SPD): Selbst dann stellt sich die Frage, warum die Bundesregierung nur einer Seite das Recht auf Nachverhandlungen einräumt und nicht auch sich selbst Nachbesserungen bzw. Nachverhandlungen ermöglich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ch kenne den Vertrag, der hie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A) zugrunde liegt, nicht im einzelnen. Ich bin aber bereit, hierzu eine schriftliche ergänzende Stellungnahme abzugeben.

(Peter Conradi [SPD]: Dann bitte ich um schriftliche Beantwortung!)

Vizepräsident Hans Klein: Bitte, Herr Neumann.

Volker Neumann (Bramsche) (SPD): War die Bundesregierung durch Vorverträge gehindert, eine Nachbesserungsklausel in den Vertrag aufzunehmen, die beiden Seiten die Möglichkeit gegeben hätte, neue Verhandlungen aufzunehm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m Bereich der DKB?

Volker Neumann (Bramsche) (SPD): Ja.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ier gab es keine Vorverträge, weil es eine internationale Ausschreibung gegeben hat.

(Volker Neumann [Bramsche] [SPD]: Entschuldigung, ich wollte nach der Berliner Stadtbank gefragt haben!)

(B) – Es hat eine Anpassungsklausel betreffend die Altkredite gegeben. Ich habe gesagt, daß es kein Grundstückseigentum gegeben hat. Bei Grundstücksverkäufen ist es üblich, solche Klauseln vorzusehen. Bei Aktienverkäufen selbst ist es normalerweise nicht üblich, dies zu tu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Schily.

Otto Schily (SPD): Herr Staatssekretär, wer im Bundesfinanzministerium hat die Verträge geprüf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ie Verträge wurden von verschiedenen Fachabteilungen des Ministeriums geprüft.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Beucher.

Friedhelm Julius Beucher (SPD): Herr Staatssekretär, heißt das, daß Herr Finanzminister Waigel keine Kenntnis von diesen Verträgen hatt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as habe ich nicht gesagt. Finanzminister Waigel – das betrifft aber auch eine Frage, deren Beantwortung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n die Reihe kommt; es handelt sich um eine Frage, die der Abgeordnete Schily an die Bundesregierung gerichtet hat – wurde unterrichtet.

Vizepräsident Hans Klein: Weitere Zusatzfragen? – Nein.

Dann rufe ich die Frage 44, die der Kollege Beucher gestellt hat, auf: (C)

Welche Immobilien befanden sich zum Zeitpunkt des Verkaufs der folgenden ehemaligen DDR-Geldinstitute bzw. ihrer Anteile in deren Besitz oder deren anteiligem Besitz: Deutsche Kredit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bank AG?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Soweit Angaben zum **Grundbesitz von Gesellschaften** nicht im Jahresabschluß zu veröffentlichen sind, zählen sie zu den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n. Ich habe auf § 395 des Aktiengesetzes und § 9 des Kreditwesengesetzes hingewiesen. Daher bitte ich um Verständnis, wenn ich nicht imstande bin, Ihre Frage nach den einzelnen Immobilien der genannten Banken ohne deren vorherige Zustimmung zu beantworten.

Vizepräsident Hans Klein: Zusatzfrage.

Friedhelm Julius Beucher (SPD): Herr Staatssekretär, Sie können auch nicht sagen, ob diese Immobilien überwiegend mitten in den Städten gelegen sind oder ob sie sich in Randlagen befunden hab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arauf kann ich leider keine Antwort geben.

Vizepräsident Hans Klein: Keine zweite Zusatzfrage? – Dann der Kollege Schily, bitte. (D)

Otto Schily (SPD): Herr Staatssekretär, ist im Bundesfinanzministerium geprüft worden, welcher Immobilienbesitz mit Bankinstituten oder Kreditinstituten veräußert wurde und welcher Wert bei der Übertragung auf die Erwerber übergegangen is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ies ist geprüft worden, Herr Abgeordneter Schily.

Vizepräsident Hans Klein: Kollege Conradi.

Peter Conradi (SPD): Selbst wenn Sie hier nicht einzelne Werte vortragen können, dann können Sie uns doch sagen, auf welche Weise diese Werte festgestellt worden sin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s sind hier natürlich Wirtschaftsprüfer eingeschaltet worden; in manchen Fällen sind auch zusätzlich Gutachter in Anspruch genommen worden.

Vizepräsident Hans Klein: Frau Kollegin Matthäus-Maier.

Ingrid Matthäus-Maier (SPD): In welcher Weise sind diese Immobilien und ihr Wert bei den Ver-

Ingrid Matthäus-Maier

- (A) kaufverhandlungen berücksichtigt worden, und ist es zutreffend, daß vor dem Verkauf noch Sanierungsmaßnahmen an den Immobilien vorgenommen wurden, und in welcher Höhe sind Aufwendungen entstand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nwieweit Aufwendungen entstanden sind, kann ich im einzelnen nicht sagen. Auch dies dürfte dem Geschäfts- und Betriebsgeheimnis unterliegen.

(Otto Schily [SPD]: Wie das denn?)

Ich kann Ihnen, Frau Abgeordnete Matthäus-Maier, diese Antwort aber schriftlich geben.

(Ingrid Matthäus-Maier [SPD]: Und die andere Frage?)

Vizepräsident Hans Klein: Frau Kollegin, Sie hatten eine Zusatzfrage. – Oder handelte es sich vorhin um eine Doppelfrage? –

(Ingrid Matthäus-Maier [SPD]: Ja, das war eine Doppelfrage!)

– Dann bitte ich, auch den zweiten Teil zu beantworten.

(Zuruf von der CDU/CSU: Den Trick werde ich mir merken!)

- (B)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ch habe in anderem Zusammenhang gesagt, daß die Immobilien angemessen berücksichtigt worden sind.

(Otto Schily [SPD]: Das ist ja nun wirklich eine Auskunft!)

Sie sind mit in den Verkaufspreis eingegangen.

(Ingrid Matthäus-Maier [SPD]: Wie hoch, das dürfen Sie wiederum nicht sag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Neumann.

Volker Neumann (Bramsche) (SPD): Hat die Bundesregierung, wenn sich herausstellen sollte, daß die Bewertungen falsch waren, eine Möglichkeit, über Nachverhandlungen eine Erhöhung des Kaufpreises zu erreich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s gibt eine Anpassungsklausel. Aber inwieweit Wertveränderungen zu Buche schlagen, kann ich im einzelnen nicht sag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Dr. Struck.

Dr. Peter Struck (SPD): Herr Staatssekretär, können Sie dem Bundestag etwas über den Inhalt dieser Anpassungsklausel berichten? Welche Kriterien sind in dieser Anpassungsklausel enthalt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Struck, dies kann ich nicht tun. Ich könnte dies tun, wenn ich ein Gespräch mit der betroffenen Bank führte und eine Offenlegung des Vertrages erfolgt.

(Abg. Otto Schily [SPD] meldet sich zu einer Zusatzfrage)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Schily, es kommen noch jede Menge Fragen zum gleichen Thema. Sie können Ihre Zusatzfrage vielleicht dann stellen.

(Otto Schily [SPD]: Gut, gut!)

Ich rufe die Frage 45 auf, ebenfalls vom Kollegen Beucher gestellt:

Welchen Wert hatte beim Verkauf der folgenden Banken bzw. ihrer Anteile ggf. der Immobilienbesitz, und wurde dieser Wert bei der Kreditpreisermittlung berücksichtigt: Deutsche Kredit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bank AG?

Bitte, Her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r **Immobilienbesitz** der genannten Banken wurde, soweit vorhanden, bei den **Kaufpreisermittlungen** bzw. bei der Bemessung der Gegenleistungen für das auf die DG-Bank übertragene Bankgeschäft der Genossenschaftsbank Berlin ausreichend berücksichtigt. Dies ist bei Unternehmensveräußerungen üblich.

Soweit sich bei späteren Bewertungen dieser Immobilien bis zum Ende des Geschäftsjahres 1994 höhere Werte als zum Zeitpunkt des Verkaufs ergeben, zieht dies nach § 36 des D-Mark-Bilanzgesetzes Änderungen der D-Mark-Eröffnungsbilanzen der betroffenen Institute mit der Folge nach sich, daß ihnen eine entsprechend geringere Ausgleichsforderung bzw. höhere Ausgleichsverbindlichkeit gegenüber dem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zugeteilt wird, die den Bund entsprechend entlastet, so daß auf diese Weise dem Bund die vollen Grundstückswerte zugute kommen.

Vizepräsident Hans Klein: Zusatzfrage.

Friedhelm Julius Beucher (SPD): Herr Staatssekretär, wer hatte denn nach dem Verkauf der Banken die Verfügungsgewalt über diese Immobili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ie Verfügungsgewalt über diese Immobilien liegt bei den Käufern.

Vizepräsident Hans Klein: Eine zweite Zusatzfrage? – Nein.

Kollege Schily, wollen Sie jetzt die Gelegenheit nutzen? – Nein. Weitere Zusatzfragen werden nicht gestellt.

Vizepräsident Hans Klein

(A) Dann rufe ich die Frage 46 auf, die die Kollegin Doris Barnett gestellt hat:

Sind Geldinstitute durch die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bezüglich der Altkredite aus der ehemaligen DDR von jedem finanziellen Risiko freigestellt worden?

Bitte, Her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s trifft nicht zu, daß die Kreditinstitute bezüglich der **Altkredite** von jedem **finanziellen Risiko** freigestellt worden sind. Soweit zum Stichtag 1. Juli 1990 Altkredite nicht werthaltig waren und sich hieraus Verluste in der D-Mark-Eröffnungsbilanz der ostdeutschen Geldinstitute ergeben haben, werden diese Verluste gemäß Staatsvertrag Anlage I Art. 8 § 4 durch die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usgeglichen.

Erweisen sich im Zeitraum nach dem 1. Juli 1990 bis zur Bilanz zum 31. Dezember 1994 Altkredite auf Grund von werterhellenden Tatsachen, die am 1. Juli 1990 bereits vorlagen, als nicht mehr werthaltig, werden die entsprechenden Verluste gemäß § 36 Abs. 4 des D-Mark-Bilanzgesetzes ebenfalls durch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ausgeglichen. Beruht allerdings die Wertlosigkeit auf wertverändernden, in der Zeit nach dem 1. Juli 1990 begründeten Tatsachen oder werden die Verluste nach dem 31. Dezember 1994 erkennbar, muß die entsprechende Belastung von den Kreditinstituten selbst getragen werden.

(B)

Vizepräsident Hans Klein: Zusatzfrage, Frau Kollegin? – Keine. Dann der Kollege Thalheim.

Dr. Gerald Thalheim (SPD): Wenn die Deutsche Genossenschaftsbank für ihre Forderungen gegenüber den LPG-Nachfolgern in voller Höhe Ausgleichsforderungen erheben kann, ist dann davon auszugehen, daß die Bank der Meinung war, daß sämtliche Forderungen nicht werthaltig sin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Dr. Thalheim, das wird sich erst bei der abschließenden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zeigen. Dieser Abschluß erfolgt auf der Basis der Werte vom 31. Dezember 1994 bis Ende 1998.

Vizepräsident Hans Klein: Frau Kollegin Matthäus-Maier.

Ingrid Matthäus-Maier (SPD): Habe ich Ihre Antwort richtig verstanden, Herr Staatssekretär, daß die Kreditinstitute für die Zeit vor der D-Mark-Umstellung am 1. Juli 1990 von jedem finanziellen Risiko freigestellt worden sind? Ich habe Sie so verstanden, daß für die Banken nur für die Zeit nach der Umstellung Risiken entstehen. Habe ich Sie richtig verstanden: Werden sie für die Zeit vor der Umstellung von jedem Risiko freigestell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ch habe das so gesagt. Soweit erkennbar ist, daß Altkredite vor dem 1. Juli 1990 nicht werthaltig waren, wird eine entsprechende Ausgleichsforderung gewährt. (C)

Ingrid Matthäus-Maier (SPD): Eine Ausgleichsforderung ist kein Risiko, sondern das Gegenteil.

Vizepräsident Hans Klein: Frau Kollegin! – Das Wort hat der Kollege Schily.

Otto Schily (SPD): Ich möchte da noch nachfragen, Herr Staatssekretär. Es geht um die Übernahme eines Kreditinstituts und einen Altkreditbestand. Trifft es zu, daß das Risiko, was diesen Altkreditbestand angeht, durch entsprechende Ausgleichsforderungen ausgeschlossen wurde? Denn es wäre wirklich ein Stück aus dem Tollhaus, wenn der Staat das Risiko zusätzlich auch für das künftige Bankgeschäft übernehm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ch habe die zeitliche Unterscheidung getroffen, Herr Abgeordneter Schily. Ich bitte zu berücksichtigen: Es ging um den Aufbau eines tragfähigen zweistufigen Bankensystems. Das ist letztlich auch eine Folge des Prinzips der Ausgleichsforderungen. Auf Grund der asymmetrischen Währungsumstellung in der damaligen DDR mußte natürlich ein Ausgleich geschaffen werden, damit ein tragfähiges und belastbares Bankensystem entstehen konnte. (D)

Vizepräsident Hans Klein: Könnten Sie, Herr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 ich weiß, Sie haben heute ein schwieriges Amt –,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ch habe immer ein schwieriges Amt.

Vizepräsident Hans Klein: – die Frage der zeitlichen Differenzierung vielleicht noch einmal erläuter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Sehr gern. Soweit Altkredite zum Stichtag 1. Juli 1990 nicht werthaltig waren und sich hieraus Verluste in der D-Mark-Eröffnungsbilanz ergeben haben, werden diese Verluste – das schreibt der Staatsvertrag vor; wir tun nichts anderes, als den Staatsvertrag umzusetzen – durch Zuteilungen von Ausgleichsforderungen an den 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 ausgeglichen.

Erweisen sich im Zeitraum nach dem 1. Juli 1990 bis zur Bilanzerstellung zum 31. Dezember 1994 Altkredite auf Grund von werterhellenden Tatsachen, die am 1. Juli 1990 bereits vorlagen, als nicht mehr werthaltig, werden die entsprechenden Verluste gemäß D-Mark-Bilanzgesetz ebenfalls durch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ausgeglichen. Wir

Staatssekretär Dr. Jürgen Stark

- (A) müssen – das enthält erstens der Staatsvertrag und zweitens das D-Mark-Bilanzgesetz – den Unternehmen und den Banken auf Grund der sehr schwierigen Bewertungssachverhal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is zum 31. Dezember 1994 die Möglichkeit geben, entsprechende Änderungen vorzunehmen.

Vizepräsident Hans Klein: Herr Kollege Neumann.

Volker Neumann (Bramsche) (SPD): Herr Staatssekretär, hält die Bundesregierung es – nachdem Sie uns das so mitgeteilt haben – trotzdem für gerechtfertigt, daß diesen Geldinstituten marktübliche Zinsen auf Altkredite berechnet worden sind, obwohl marktübliche Zinsen, wie jeder weiß, zu einem erheblichen Teil eine Risikoprämie enthalt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ch habe gesagt, Herr Abgeordneter, es ging um den Aufbau eines funktionsfähigen Bankensystems. Dazu benötigten wir das Instrument der Ausgleichsforderungen. Dieses Instrument wurde extra geschaffen, um angesichts der asymmetrischen Umstellungssätze für die Aktiv- und die Passivseite einen Ausgleich zu finden.

Im Ergebnis hatten die Banken der DDR mehr D-Mark-Verbindlichkeiten, als sie D-Mark-Forderungen hatten. Die Lücke auf der Aktivseite der Bankbilanzen wurde durch entsprechende Ausgleichsforderungen ausgefüllt.

- (B) Da Sie jetzt von den Zinsen sprechen, Herr Abgeordneter, muß ich darauf hinweisen, daß den Banken ein formaler Bilanzausgleich – wir haben das damals sehr genau mit der Bundesbank besprochen – wenig geholfen hätte; denn es ging um die Schließung der Rentabilitätslücke in der Gewinn- und Verlustrechnung. Dies war nur durch eine marktmäßige Verzinsung der Ausgleichsforderungen möglich.

Ich möchte darauf hinweisen, daß eine Folge der marktmäßigen Verzinsung die Verbriefung der Ausgleichsforderungen war. Nur so war es mögli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 solides Bankenrefinanzierungssystem zu schaffen.

(Otto Schily [SPD]: Sie bekommen eine Risikoprämie ohne Risiko! Das ist eine Subventionierung!)

Vizepräsident Hans Klein: Kollege Conradi.

Peter Conradi (SPD): Ist der Eindruck zutreffend, Herr Staatssekretär, daß bei der Abwicklung dieser Verträge sämtliche Risiken beim Bund und sämtliche Vorteile bei den Banken lagen, daß man also richtigerweise eher von einer Bankenregierung als von einer Bundesregierung sprechen müßte?

(Heiterkeit und Beifall bei Abgeordneten der SP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Conradi, Sie

können nicht erwarten, daß ich auf diese Frage ernsthaft antworte. (C)

(Peter Conradi [SPD]: Ich möchte wissen, ob bei den Banken irgendwelche Risiken lagen! – Ich möchte darum bitten, daß das Mikrofon anbleibt, solange ich hier stehe! Muß ich jedesmal daraufdrücken?)

Vizepräsident Hans Klein: Doch, das muß leider jeder bei der fabelhaften Technik, die wir in diesem Hause haben.

Peter Conradi (SPD): Ich möchte nicht auf den polemischen Teil meiner Frage eine Antwort, sondern auf den sachlichen Teil meiner Frage, und der hieß: Gab es überhaupt irgendwelche Risiken bei den Banken? Hatten sie nicht sämtliche Vorteil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Vielen Dank, Herr Abgeordneter, für diese Klarstellung. Es gab natürlich Risiken bei den Banken. Ich habe das im Zusammenhang mit einer anderen Frage, die ich vorher beantwortet habe, dargelegt.

Wir brauchten zum 1. Juli 1990 – das mußte eine ganz entscheidende Infrastrukturaufgabe für die Banken, die si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ngagiert haben, sein – ein funktionierendes Bankensystem, um überhaupt die Umstellung der Mark der DDR auf die D-Mark vornehmen zu können.

(Otto Schily [SPD]: Das hat die Bundesregierung subventioniert! Das ist interessant!)

Sie wissen, Herr Abgeordneter Conradi, daß der Bankensektor die Schnittstelle für den Transformationsprozeß ist. (D)

(Otto Schily [SPD]: Warum mußte denn subventioniert werden?)

– Kann ich ausreden?

Es kann nicht so sein, daß Sie die Behauptung aufstellen, daß hier in erster Linie etwas für die Banken getan wurde. Ich habe dargestellt, wie es zu den Ausgleichsforderungen gekommen ist und wie sie begründet werden. Ich habe dargelegt, daß ein funktionierender Kapitalmark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ntstehen mußte.

Sie müssen berücksichtigen, Herr Abgeordneter, daß von seiten der Banken, die si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ngagiert haben, in ganz gewaltigem Umfang Infrastrukturinvestitionen erforderlich waren, und zwar sowohl in Immobilien als auch in die Schulung des Personals. Ich möchte in diesem Zusammenhang erwähnen, daß sich der Bestand an Mitarbeitern bei den Banken der früheren DDR im Zuge der Privatisierung und des Aufbaus eines zweistufigen Bankensystems fast verdoppelt hat.

(Otto Schily [SPD]: Als Geschenkprogramm für die Banken! – Peter Conradi [SPD]: Beim Staatssekretär brennt die rote Lampe am Mikrofon dauernd! Warum dann nicht bei den Abgeordneten, wenn sie fragen?)

(A) **Vizepräsident Hans Klein:** Auch wir haben das Problem mit dem Knopf, Herr Kollege Conradi.

Herr Kollege Ilte.

Wolfgang Ilte (SPD): Herr Staatssekretär, das hört sich fast so an, als ob die Banken bei diesen Geschäften Verluste gemacht hätten. Wir sind anderer Auffassung.

Die Frage lautet: Gibt es in Ihrem Hause Berechnungen oder vielleicht auch Schätzungen, welche Gewinne beim Verkauf der DDR-Banken insgesamt entstanden sind?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ies betrifft eine Frage, die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noch gestellt wird. Insgesamt ist durch den Verkauf der DDR-Banken ein Erlös von knapp 11 Milliarden DM erzielt worden.

(Otto Schily [SPD]: Lächerlich! Die Frage war eine andere!)

Vizepräsident Hans Klein: Kollege Beucher.

Friedhelm Julius Beucher (SPD): Herr Staatssekretär, habe ich Sie richtig verstanden, daß Sie soeben ausgedrückt haben, daß bei der Umstrukturierung des DDR-Bankensystems Grundsätze sparsamer und sorgfältiger Haushaltsführung nur deshalb verletzt worden sind, um den Termin 1. Juli 1990 einzuhalten?

(B)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hier sind keine Grundsätze des sparsamen Umgangs mit Steuergeldern verletzt worden. Es ging um den Aufbau eines zweistufigen Bankensystems. Voraussetzung dafür war natürlich die Einführung der D-Mark zum 1. Juli 1990. Voraussetzung war, daß der Umstrukturierungsprozeß, der Privatisierungsprozeß greifen konnte.

Hierzu benötigten wir – diese Erfahrung machen wir auch in den mittelosteuropäischen Staaten – ein funktionsfähiges Bankensystem.

Dieses Bankensystem war – so haben das auch Sachverständige im Jahr 1990 ermittelt – nicht funktionsfähig, es war von der Staatsbank zentral gesteuert. Die Banken in den Kreisen waren lediglich Filialen, Verwaltungsstellen der Staatsbank in Berlin. Es wurde keine Geschäftsbankentätigkeit betrieben. Es mußte erst die Möglichkeit eröffnet werden, Geschäftsbankentätigkeit auszuüben.

Vizepräsident Hans Klein: Kollege Hacker.

Hans-Joachim Hacker (SPD): Herr Staatssekretär, Sie haben eben dargestellt, in welcher Weise die Bundesregierung bestrebt war, Risiken für die Banken zu minimieren, um es einmal vorsichtig auszu-drücken. Ich frage Sie in diesem Zusammenhang: Hat die Bundesregierung in dieser Phase auch Über-

legungen angestellt, wie die Altschulden, die auf den kommunalen Gesellschaftsbauten lagen und die unter den Bedingungen eines staatlichen Bankensystems in einer nicht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entstanden waren, für die Kommunen minimiert werden konnten?

(C)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Sie wissen, daß über die Frage der kommunalen Altschulden intensive Verhandlungen und Gespräche zwischen Bund, Ländern und den betroffenen Kommunen geführt werden. Auch das ist ein Grund, warum Frage 37 heute nicht in der Fragestunde, sondern schriftlich beantwortet wird.

Vizepräsident Hans Klein: Frau Kollegin Dr. Lucyga.

Dr. Christine Lucyga (SPD): Herr Staatssekretär, können Sie mir erläutern, welche Notwendigkeit die Bundesregierung bewogen hat, die Altkredite im Zuge der Umstrukturierung des Bankensystems sofort mit Hochzinsen zu belegen, mit denen sie vorher nicht belastet waren, und dadurch eine Eigendynamik in Gang zu setzen, an der noch heute zu tragen ist?

(Vorsitz: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rau Abgeordnete, es gab im Jahr 1990 unter den Sachverständigen die einhellige Meinung – dazu ist auch ein Sondergutachten des Sachverständigenrates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eingefordert worden –, und es bestand ebenfalls auf seiten der Bundesbank eine klare Haltung, daß nur durch die Übernahme marktüblicher Zinsen ein Prozeß in Gang kommen kann, der mit marktwirtschaftlichen Grundsätzen vereinbar ist. Ich möchte darauf hinweisen, daß durch Sachverständige – die Wirtschaftsforschungsinstitute haben dies in mehreren Studien und Analysen belegt – und Befragungen, die bei Unternehm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urchgeführt wurden, klargestellt worden ist, daß die Altschulden nie als entscheidende Last für den Anpassungsprozeß angesehen wurden, sondern hierfür in erster Linie andere Faktoren maßgebend sind.

(D)

(Otto Schily [SPD]: Anders der frühere Staatssekretär im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Otto Schlecht! Immerhin eine bedeutende Persönlichkeit!)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Eine Zusatzfrage des Abgeordneten Schulz.

Werner Schulz (Berlin) (BÜNDNIS 90/DIE GRÜNEN): Herr Staatssekretär, welche Notwendigkeit bestand denn bei der – um es vorsichtig zu sagen – fragwürdigen Privatisierung und dem fragwürdigen

Werner Schulz (Berlin)

- (A) Verkauf der Banken dafür, sämtliche Forderungen den Banken gleich mit zu überlass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inwieweit im Zusammenhang mit der Umsetzung des Staatsvertrages und der Anwendung des D-Markbilanzgesetzes Ausgleichsverbindlichkeiten anfallen, wird sich zeigen. Wir sind hier in intensiver Prüfung. Ich werde in Beantwortung anderer Fragen darauf zurückkommen.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st gemeinsam mit de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dabei, Prüfungen bei der Gewähr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vorzunehmen. Das BAKred war bisher in der Lage, ungerechtfertigte Ausgleichsforderungen abzuwehren. Auch hierzu gibt es einen Bericht des Bundesrechnungshofs. Der Bundesrechnungshof hat diese Möglichkeit besonders hervorgehoben und darauf hingewiesen, daß durch das Verhalten, durch die strenge Prüfung des BAKred bereits Beträge in Milliardenhöhe für den Bund erspart wurden.

(Otto Schily [SPD]: Wie hoch denn?)

– Das ist keine Frage, Entschuldigung.

(Otto Schily [SPD]: Sagen Sie es doch!)

– Der Bundesrechnungshof hat dies mit „in Milliardenhöhe“ beziffert.

(Otto Schily [SPD]: Sagen Sie die Gesamthöhe!)

- (B)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Eine Zusatzfrage des Abgeordneten Thalheim.

Dr. Gerald Thalheim (SPD): Herr Staatssekretär, wie beurteilen Sie Ihre letzten Aussagen hinsichtlich der Werthaltigkeit der Kredite vor dem Hintergrund der Tatsache, daß Staatssekretärin Karwatzki in dem Bericht an den Rechnungsprüfungsausschuß einräumen mußte, daß 95 Prozent der Forderungen der Treuhandanstalt letztendlich nicht bedient werden konnten, sondern zu Lasten der Treuhandanstalt, sprich: des Erblastentilgungsfonds, geh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s geht bei den Ausgleichsforderungen, den Ausgleichsverbindlichkeiten, darum – ich habe darauf hingewiesen –, daß exakte Prüfungen erfolgen und daß diese bis zum Ende des Jahres 1998 auf der Basis des Bilanzstichtags 31. Dezember 1994 endgültig abgeschlossen sein werden.

Bezug nehmend auf den Zwischenruf des Abgeordneten Schily – Sie sehen, wie entgegenkommend ich bin –: Wir sind von Ausgleichsforderungen in Höhe von 110 Milliarden DM ausgegangen. Wir stellen heute fest, daß wir damit rechnen können, daß sich diese Ausgleichsforderungen auf etwa 98 Milliarden DM belaufen dürften.

(Otto Schily [SPD]: Also ohne den Rechnungshof hätten Sie 12 Milliarden DM mehr gezahlt!)

– Wenn ich das, weil es wichtig ist, gerade beantworten darf – wir können den Dialog zu Lasten der anderen Abgeordneten fortsetzen; auch so bekommen wir die Zeit herum –:

(Dr. Peter Struck [SPD]: Sagen Sie es ruhig, Herr Staatssekretär!)

Dazu brauchen wir nicht die Aufforderung des Bundesrechnungshofs. Es ist eine Selbstverständlichkeit, daß das BAKred gemeinsam mit uns hart prüft. Wie gesagt, es sind ungerechtfertigte Ausgleichsforderungen bereits in Milliardenhöhe zurückgewiesen worden. Die Bewertung geht weiter und wird bis Ende 1998 abgeschlossen sein.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Jetzt kommen wir zu Frage 47 der Abgeordneten Barnett:

Wie ist bei der Festlegung des Kaufpreises berücksichtigt worden, daß Geldinstitute durch ihnen zugeteilte Ausgleichsforderungen über deren Umwandlung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neben Zinserträgen auch andere Erträge erzielen konnten?

Bitt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ei den Verkäufen oder Geschäftsübertragungen von ehemaligen DDR-Kreditinstituten hat jeweils eine Bewertung des Geschäfts stattgefunden. Diese Bewertung erfaßte alle Aktiva und Passiva einschließlich der Ausgleichsforderung oder Verbindlichkeiten. Ein besonderer Zuschlag für **Ausgleichsforderungen**, durch den der **Kaufpreis** hätte angehoben werden können, war nicht möglich, weil eine positive Zinsmarge aus den Ausgleichsforderungen auf Dauer nur dann zu erwirtschaften ist, wenn die Zinsen aus dem Aktivgeschäft ständig höher sind als die für die entsprechenden Passiva zu zahlenden Zinsen.

Die Verzinsung der Ausgleichsforderungen richtet sich nach dem kurzfristigen Drei-Monats-Fibor – ich habe an anderer Stelle darauf hingewiesen –, dessen Höhe bei normalen Kapitalmarktverhältnissen unterhalb des mittel- und langfristigen Kapitalmarktzins liegt. Da damals überwiegend angenommen wurde, daß die zum Zeitpunkt der Übertragung am Kapitalmarkt vorherrschende inverse Zinsstruktur nicht länger anhalten würde, waren Banken nicht bereit, einen Preiszuschlag zu zahlen. Vielmehr haben die Banken auf Zins- und Bewertungsrisiken hingewiesen. Auch in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umgewandelte Ausgleichsforderungen werden mit dem Drei-Monats-Fibor verzinst.

Ich darf noch die Anmerkung machen, daß es mit der marktmäßigen Verzinsung in einem anderen Zusammenhang und der späteren Verbriefung der Ausgleichsforderungen gelungen ist, einen ersten Ansatz für eine solide Bankenrefinanzi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fzubauen.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Eine Zusatzfrage der Abgeordneten Barnett.

(C)

(D)

(A) **Doris Barnett** (SPD): Herr Staatssekretär, stimmt die Bundesregierung dann wenigstens unserer Auffassung zu, daß beim Verkauf von ehemaligen DDR-Banken bzw. ihren Anteilen eine Übernahme der Alt-kredite bzw. Ausgleichsforderungen nicht als ergebnisneutral anzusehen ist?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rau Abgeordnete, das wird sich im Zusammenhang mit den Prüfungen, die durch das BAKred vorgenommen werden, zeigen.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Keine weiteren Zusatzfragen.

Dann rufe ich die Frage 48 des Abgeordneten Dr. Gerald Thalheim auf:

Beim Verkauf welcher der nachfolgend aufgelisteten ehemaligen DDR-Banken bzw. deren Anteilen haben die Bundesregierung oder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bei der Festlegung des Kaufpreises ein Agio angesetzt, und auf welche Weise wurde ggf. das Agio festgelegt: Deutsche Kredit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bank AG?

Bitte.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n den Verhandlungen über den Verkauf der Berliner Stadtbank AG, der 64prozentigen Beteiligung der Staatsbank Berlin und der Deutschen Handelsbank AG konnte bei der **Festsetzung des Kaufpreises ein Agio** festgesetzt werden. Ein festgelegtes Verfahren, Herr Abgeordneter, zur Ermittlung eines Agio gab es nicht. Das Agio wurde jeweils im Verhandlungswege bestimmt.

(B)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Eine Zusatzfrage? – Das ist nicht der Fall.

Ich rufe die Frage 49 des Abgeordneten Thalheim auf:

Beim Verkauf welcher der nachfolgend aufgelisteten ehemaligen DDR-Banken bzw. deren Anteilen haben die Bundesregierung oder ihr unterstellte Institutionen bei der Festlegung des Kaufpreises ein „good will“ angesetzt, und auf welche Weise wurde ggf. das „good will“ festgesetzt: Deutsche Kreditbank AG, Berliner Stadtbank AG, Genossenschaftsbank Berlin, Deutsche Außenhandelsbank AG, Deutsche Handelsbank AG?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In den Verhandlungen über den Verkauf der Anteile an der Deutschen Kreditbank AG und der Deutschen Außenhandelsbank AG konnte bei der **Kaufpreisbestimmung ein Goodwill** durchgesetzt werden.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Keine Zusatzfrage? – Dann schaffen wir noch eine Frage.

Ich rufe die Frage 50 des Abgeordneten Dr. Peter Struck auf:

Wie hoch schätzt die Bundesregierung die endgültige Belastung des Erblastentilgungsfonds aus der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an Geldinstitute, um die Verbindlichkeiten einschließlich Rückstellungen zu decken und um ein Eigenkapital in Höhe von 4 % der Bilanzsumme zu erreichen?

Dr. Jürgen Stark, Staatssekretär 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err Abgeordneter Dr. Struck, die Zahlen habe ich bereits genannt. Die endgültige **Belastung des Erblastentilgungsfonds aus der Zuteilung von Ausgleichsforderungen** wird zur Zeit auf zirka 98 Milliarden DM statt der ursprünglich angenommenen 110 Milliarden DM geschätzt. Davon entfallen 92 Milliarden DM auf die Kreditinstitute und 6 Milliarden DM auf Außenhandelsbetriebe.

(C)

Inwieweit Ausgleichsforderungen auf Verbindlichkeiten und Rückstellungen bzw. auf ein Eigenkapital in Höhe von 4 Prozent der Bilanzsumme entfallen, ist noch nicht bezifferbar. Dies ist die Auskunft, die ich vom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erhalten habe. Es gibt bisher noch keine vollständigen Zuteilungen; es gibt Vorabzuteilungen, Teilzuteilungen im Normalfall bis zu 90 Prozent der erwarteten oder veranschlagten Ausgleichsforderungen.

Vizepräsidentin Dr. Antje Vollmer: Eine Zusatzfrage? – Das ist nicht der Fall.

Dann beende ich hiermit die Fragestunde, weil die Zeit abgelaufen ist.

Ich rufe den Zusatzpunkt 1 auf:

Aktuelle Stunde auf Verlangen der Fraktion der SPD

Haltung der Bundesregierung zu Vorschlägen, die Lohnfortzahlung im Krankheitsfall zu kürzen

Als erster hat der Abgeordnete Gerd Andres das Wort.

(D)

Gerd Andres (SPD): Frau Präsidentin! Meine sehr verehrten Damen und Herren! Die sozialpolitischen Sprecher der Koalitionsfraktionen, Frau Dr. Gisela Babel, F.D.P., und Julius Louven, CDU/CSU,

(Dr. Peter Struck [SPD]: Wo ist die denn überhaupt? – Ulrich Irmer [F.D.P.]: Die kommt gleich! Ich habe schon angerufen!)

haben wieder eine ihrer berüchtigten öffentlichen Wochenendnummern abgezogen, und zwar diesmal in der Berliner Boulevardpresse.

(Dr. Peter Struck [SPD]: Hört! Hört!)

Wer sich die Mühe macht, in Pressearchiven zu stöbern, wird schnell Belege dafür finden, daß der Begriff „Wochenendnummer“ für die letzten Monate in schöner Regelmäßigkeit belegt werden kann.

(Ottmar Schreiner [SPD]: Wer ist denn das Nummern-Girl?)

Das gilt für den 28. März, und das gilt für den 20./21. August, und immer ging es um ein und dasselbe Thema: die Lohnfortzahlung im Krankheitsfall.

In der „Süddeutschen Zeitung“ vom 23. August schrieb schon deren Korrespondentin Dagmar Deckstein: Im Sommertheater ist nicht jede Komparsennummer als Pausenfüller wenig ernst zu nehmen.

문서 번호 71

통일의 경제적 비용

1996 년

담당자 / 기관: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동독, 신탁관리청

내용:

이 문서는 1998 년 정권을 잡게 된 사민당 슈뢰더 수상 시기에 재무차관을 역임한 하이너 플라스벡이 1996 년에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에 조언을 주는 형식으로 작성 발표한 영어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입

- 통일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거나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간 공적 자금의 규모는 1993 년 기준 1 천 7 백억 마르크에 달했다.
- 서독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및 국고 세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분단과 관련된 지출비용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 러시아 서부지역 주둔군(Westgruppe der sowjetischen Truppen) 철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통일 독일의 국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산출된다.
- 동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일 비용에 포함시켜 정산해서는 안된다.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

2.1 자본 수요에 관한 초기 견적

- 초기에는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필요 자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동독의 경우 국고 수입은 높은 반면, 국고 지출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2 동독에 대한 서독 공적 자금 지급

- 1993 년에만 1 천 7 백억 마르크의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10 억 마르크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매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원되며, 저금리 용자도 제공된다. 동독에 대한 이러한 이전 지출금은 자본시장 및 세수로 감당하도록 한다.

- 이전 지출금을 서독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해소되었고, 동독에서의 경제 수요는 서독 경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각 분야에 따른 자원 분배

- 이전 지출금은 대부분 사회적 영역과 교통 체계 정비에 사용된다.
- 서독의 각 주정부에서 분담해야 할 기여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

- 통일 이후 그림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는 독일 통일 기금(Fonds Deutsche Einheit), 채무 청산 기금(Kreditabwicklungsfonds) 및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으로부터 충당된다.
- 독일 통일 기금은 새로운 재정 배분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데 사용된다.
- 채무 청산 기금에서는 동독의 부채 및 채무를 인수했다.
- 가장 중요한 그림자 예산은 신탁관리청이 담당하며, 신탁관리청의 최종 대차대조표는 (1994년 말 기준) 최소 2천 7백 50억 DM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 통일 이후에는 유럽 부흥 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특별 기금 및 개발 촉진 은행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동독 및 서독 국영 철도는 1994년 초 합병되었지만, 예산은 각각 별도로 관리된다.

4. 동독 자본재

- 1989년 동독은 8천억 동독 마르크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물가수준: 1985년). 이는 서독 마르크로 약 3천 1백 90억 마르크에 해당하게 된다(물가수준: 1990년).
- 경제·화폐 및 사회통합(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으로 인해 수많은 공장이 폐쇄되었고, 제조 산업에서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고무적인 의견으로는 동독의 자본재가 1천 5백억 마르크에 달하는 동독 투자로 인해 향후 6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하게 되고, 아울러 3백 5십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출처: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 년. German Unification - 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p. 189-200

3 Economic costs of unification

3.1 Introduction

To the question as to the costs of German unification is no **definitive** answer, and it is not even clear what exactly is meant by the term **'costs'**.

The economic costs of unification are often treated as being the same as public spending on East Germany. Public transfers from West to East Germany can be determined without great difficulty and for 1993 were estimated at DM 170 bill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llow for the fact that in West Germany both GDP and public revenue have noticeably increased as a consequence of unification. At the same time, costs previously incurred as a result of the division of Germany (subsidies for Berlin and the border area with the GDR the transit charge, the buying of freedom for prisoners and 'welcome money') no longer apply. The question of the total burden imposed on West German public finances by German unification is therefore difficult to answer. The Federal Republic's payments to the former Soviet Union for the withdrawal of its troops and the construction of homes for returning military personnel (DM 19 billion) are also part of the costs of 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end of the Cold War means that the Federal Republic can drastically reduce its military expenditure. The subsidies to East German firms for the loss of sales to the east European countries and the successor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could also be deducted from the costs of unification, because this measure helped to stabilize industrial output in East Germany.

Some of the money spent was used to build up a new, competitive capital stock. This required resources which in the long term will mainly have to be supplied by private individuals. The formation of a capital stock is, however, investment and cannot be included in the 'costs' of unification.

3.2 *Transfers from West to East Germany*

3.2.1 *Original estimates of financial requirements.* In the spring and early summer of 1990 there were unclear and sometimes contradictory ideas about the economic effects of German economic, monetary and social union (GEMSU) on the GDR. The estimates ranged from expectations of a second German 'economic miracle' similar to that experienced by the Federal Republic after the currency reform of 1949, to predictions of millions of unemployed in the GDR.⁴⁶

The DIW was the first institution to attempt a quantitative predic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GDR.⁴⁷ It predicted that, given favourable wage trends, the GDR economy would be able to survive GEMSU without dramatic falls in output, and unemployment would only amount to

one million people.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e required volume of fiscal transfers over the medium term was estimated at DM 50 billion p.a.

In the joint analysis conducted by Germany's five leadi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at the beginning of April 1990 it was still assumed that transfer payments of DM 15 to 20 billion for initial finance and infrastructure measures would be sufficient,⁴⁸ and that they would to a large extent be financed by the growth-induced increases in tax revenue in West Germany. Tax increases were not considered necessary in the medium term, although it was pointed out how important wages were for the competitive position of East German firms. According to this analysis: 'A macro-economic wage level which takes account of the measured difference in productivity is not sufficient to avoid high unemployment after the creation of a currency union. The theory that 'lower productivity and accordingly lower wages in the GDR result in the same costs and therefore the same competitiveness' would only hold true if the GDR was already part of the global economic division of labour and had found her specialist niche through comparative advantage. The output structure in the GDR, however, was the output structure of a country whose politics were largely orientated towards self-sufficiency. That was, compared with the chances of an individual country on the world market, far too wide a range of products was produced in the GDR. If such a country is exposed to the competitive pressure of the world market overnight it must fundamentally change its output structure.'

This was the specific structural problem in the GDR. It could have been reduced with a cautious wage policy, which would have made it easier for firms to switch over to the production of competitive goods. The DIW recommended:

'At the firm level wage negotiations should begin with the aim of creating a sound cost basis for firms. In determining the wage policy line all those involved should be led by the observation that wage agreements which lead to a wage increase when entering the currency union, that is before there is a corresponding increase in productivity in the GDR, would worsen the GDR economy's problems of competitiveness'.⁴⁹

On the eve of GEMSU the economic effects of German unification were assessed even more critically by the DIW. Sharp reductions in output and a fall in employment of almost 25 per cent within a year were expected. The GDR budget deficit was forecast to reach DM 70 billion in 1991, of which only just over DM 40 billion were to be borne by the

Federal Republic. A wage growth guideline of 10 per cent was recommended to GDR firms for the first year of the currency union.⁵⁰

In fact output and employment trends in East Germany proved to be far worse. The originally expected financial deficit in East Germany of around DM 50 to 70 billion turned out to be around DM 140 billion. The transfer of public resources from West to East of DM 130 billion was markedly higher than the originally expected sum of DM 20 to 40 billion. An analysis of the components of public finances shows serious underestimates of the expenditure on social services, public consumption and subsidies. Only expenditure on public investment was overestimated. On the revenue side, social contributions were correctly predicted, but tax revenue was seriously overestimated.

Table IV.6 Financial Transfers to East Germany¹⁾
DM billion

	1991	1992	1993 ¹⁾
Financial transfers to state and government ²⁾	111.6	124.4	128.0
- German Unity Fund	35.0	36.4	35.2
- State programme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12.0	12.0	-
- Central government spending arising out of unification (net figure excl. the Gemeinschaftswerk)	50.8	59.5	74.3
- Redistribution of VAT-receipts among federal states	10.8	11.5	12.5
- Transfers by federal states	2.0	2.5	3.0
- Fiscal losses in West Germany arising out of unification ³⁾	1.0	2.5	3.0
Transfers to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20.5	31.8	42.0
- Transfers from West to East German unemployment insurance	20.5	31.8	40.0
- Transfers from West to East German pension insurance	-	-	2.0
Total financial transfers	132.1	156.2	1701.0

1) Forecast by the participating institutes; figures rounded.- 2) Excl. subsidization of interest payments for ERP loans.- 3) Tax losses in West Germany arising out of tax allowances for investment in the new federal states.

Sources: Federal Statistical Office; own calc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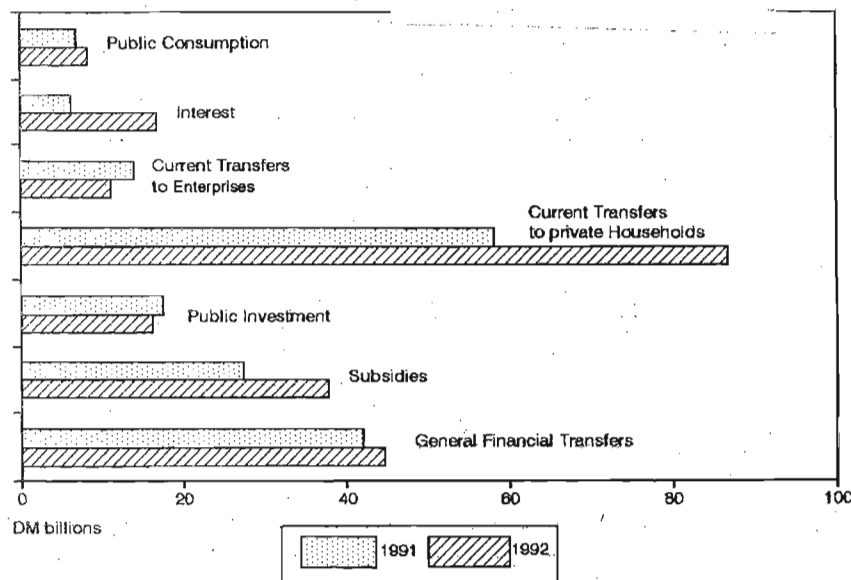
3.2.2 Payments from West German public finances for East Germany. Estimates of public financial transfers from West to East Germany have been made by various institutions, each of which used its own method.⁵¹ However, the estimates differ only within a narrow range. It should be noted that resources from public sector institutions which statistically are part of the business sector (the post office, the railways, the *Treuhandanstalt*) are *not* included. In view of its transfer character, the majority of *Treuhandanstalt* spending especially, should in fact be considered as party public spending.

Figure IV.9 shows the transfer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e *Länder*, the Germany Unity Fund and the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to East German regional administrative bodies and the East German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The six⁵² leading Germ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predicted an increase to DM 170 billion for 1993. This did not include the net receipts from the EC of DM 1 billion annually and the interest rate subsidies for investment credits in East Germany. This low-interest credit includes loans to finance private sector investment, credit to local authorities to promote economic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loans for housing construction. There were also a number of tax incentives for East Germany which were basically introduced to promote investment.

The sum of these transfers is, however, not identical to the burden on West German public finances. On the one hand costs due to the division of Germany (essentially subsidies for Berlin and the border area with the GDR, and transit charges) have fallen or disappeared altogether, and on the other the great demand in East Germany for West German goods markedly increased economic growth in West Germany. This increased tax revenue and social contributions.

The financial transfers were in the main financed through the capital market, although there were also considerable increases in taxes (the temporary solidarity supplement on income tax and corporation tax, VAT, and the duties on oil, insurance and tobacco), charges (telephone charges)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The Federal Government slightly reduced expenditure in the West, although the West German *Länder* spent the increased tax revenue, so that public expenditure in West Germany was barely influenced by German unification.

3.2.3 Distribution of resources by sector. The greater part of the financial transfers to East Germany went to the social sector. Much of this spending was on 'traditional' West German items, such as child allowances, housing



Sources: Deutsche Bundesbank, Calculations by DIW.

Figure IV.9 Public Transfers to East Germany by Gross Expenditures

benefit, educational grants, and payments to the social insurance. The Federal Government has also financed early retirement and the social supplement to low pensions and unemployment benefit payments in East Germany, items which are not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in West Germany. The unemployment insurance institution also provides considerable transfers for unemployment benefit, short-time working benefit and the implementation of labour market instruments (retraining, employment creation schemes, etc.).

The transport system in East Germany is another sector which received large financial transfers from West Germany: DM 13 billion and DM 18 billion were made available in 1991 and 1992 respectively (including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Most of this went to the *Deutsche Reichsbahn* (the East German railway) and around a quarter was used for the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long distance rail routes. The remainder went to the *Länder* and the local authorities for local public transport and the expansion of the road network.

Aid to firms is provided through a number of different programmes and is often aimed at specific groups, for example the promotion of regionally and structurally disadvantaged areas, agriculture, coastal protection, economic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The measures used include investment subsidies, preferential interest rates and tax incentives. Federal payments to firms were around DM 15 billion for both 1991 and 1992. Tax incentives for East Germany, which mainly benefit firms, were of the order of DM 4.5 billion and DM 9 billion in 1991 and 1992 respectively. Finally, considerable funds were loaned to firms at preferential interest rates. Other Federal expenditure on East Germany includes expenditure on administration, payments to the 'German Unity' Fund and the credit fund as well as interest payments on credit taken out to support East Germany.

Under the federal structur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ich' *Länder* and local authorities are obliged to transfer funds to poorer *Länder* and local authorities under a system of vertical income redistribution. By contributing to the 'German Unity' Fund the West German *Länder* and local authorities were released from this obligation. In contrast to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Federal Labour Office, therefore, the contribution of the West German *Länder* and local authorities to the financial transfer remained very modest. Their (direct) transfers for 1991 and 1992 were DM 8 billion and DM 12 billion respectively. In terms of their budget this was between 2 and 2.5 per cent, not including additional tax revenue because of the increase in growth caused by unification. However, the overall contribution of the West German *Länder* was larger due to their share in the 'German Unity' Fund.

Dividing the transfers into use for consumption and investment purposes is very difficult. The transfer benefits to private households are particularly important amongst the transfers for consumption purposes. Of the over DM 150 billion of financial transfers in 1992 around half went directly to private households. Including expenditure on interest rates, financing expenditure on staff and assets and regular grants to firms in consumption expenditure, suggests that up to three quarters of the financial transfers were used for consumption purposes. Around DM 20 billion was used for investment, and the remainder consisted of general payments which cannot be divided into uses.

Determining the importance of financial aid for investment purposes is much more difficult. Taking investment grants, tax incentives and loans at preferential rates of interest together, such support amounted to around DM 40 billion in 1992. Expenditure on loans at preferential rates is con-

siderably lower than total credit granted. For this reason the major West German research institutes - in contrast to the Bundesbank - did not include them in public financial transfers. Whilst payments for capital investment did not change in 1992 on the previous year, expenditure on interest and the regular payments to private households again rose sharply. The share of expenditure dedicated to consumption therefore increased further. As both incomes and unemployment rise in East Germany this may continue.

3.3 *Secondary public budgets*⁵³

The standard public budget consists of the budgets of the administrative bodies (Federal Government, *Länder*, local authorities) and those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pension, unemployment and health insurance). Even before German unification some semi-public secondary budgets were in existence, which were generally set up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then continued for years or decades. Examples include the ERP special fund, which grew out of the Marshall Plan Aid from the USA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Bundespost* (post office) and *Bundesbahn* (railway) budgets, the fund for financial compensation for losses suffered during the war by exiles, and a compensatory fund to guarantee the use of domestic coal in electricity production. There were also Federal promotion banks, whose job it was to give economic support with the help of credit at preferential rates. The institutions running these so-called secondary public budgets are all fully state-owned and they are all able to raise credit.

After German unification some new secondary budgets were set up and others were expanded. The 'German Unity' Fund, the credit fund and the *Treuhandanstalt* were founded. The role of the 'German Unity' Fund was to increase the revenue of the East German *Länder* and local authorities until a new system of revenue redistribution between *Länder* came into force. Of the fund's total resources of DM 160 billion from 1990 to 1994 DM 95 billion were raised on the capital market. Debt servicing is shared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the West German *Länder* and local authorities.

The so-called 'credit fund' (*Kreditabwicklungsfonds*) took over the debts of the former GDR budget (DM 28 billion) and the liabilities which arose from the change of currency. DM 30 billion alone can be put down to the currency union of 1st July 1990. It is still too early to estimate the burden arising out of the demands and liabilities of the GDR's monopoly

on foreign trade and currency. This also includes the ruling in the unity treaty to retain the exchange rate of 1 transfer rouble = DM 2.34 until the end of 1990. The outstanding debts of the *Treuhand* firms were mainly taken on by the *Treuhandanstalt*, and most of those of the formerly state-owned or cooperative housing (DM 51 billion) are to be assum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Länder* in 1995.

The most important secondary budget is the *Treuhandanstalt*. The size of the so-called 'people's property' was still being discussed at the time of the GEMSU. When the *Treuhandanstalt* was dissolved it was suggested that all former GDR citizens should be given a share in this property. Current estimates, however, assume that the *Treuhandanstalt* will end up with a negative result of at least DM 275 billion at the end of 1994.

The *Treuhand's* opening balance of 1st July 1990, which was not calculated until the end of 1992, showed a deficit of DM 210 billion despite gross assets of DM 114 billion. A far greater volume of resources may be required for environmental cleaning up measures. According to estimates ecological work may cost around DM 50 billion in the next few years.⁵⁴ There are also costs arising out of the closure of nuclear reactors and the recultivation of land used for lignite and uranium mining. The *Treuhandanstalt* is also legally bound to give wide-ranging loan guarantees. By the end of 1992 around DM 19 billion alone had to be spent on, another DM 12 billion from interest payments to the credit fund and for its own credit.

Following German unification the activities of the ERP special fund and the Federal Government's promoting banks was greatly expanded. These institutions raised credit of DM 13.5 billion in 1989, a figure which to DM 35 billion in 1992. Even though this increase in credit raised is subject to much more preferential interest rates than normal public borrowing, the Federal Government still had to transfer over DM 10 billion to the ERP special fund in the last three years just to enable the preferential interest rates to be granted. The Federal Government's promoting banks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Deutsche Ausgleichsbank*, *Berliner Industriebank*) granted around DM 35 billion in preferential rate credit in 1992 alone. The interest rate subsidy is partly pai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partly from the institutes' revenue. From 1995 the debts of the credit fund and the *Treuhandanstalt* are taken over by a new fund for inherited debt. Depending on the solution to the debt question for housing firms this fund receives liabilities of about DM 400 billion to DM 450 billion. The fund itself then receives regular contributions from the Federal

budget. A compensation fund is to be set up to offer partial compensation for property expropriated in the former GDR. This fund is not expected to raise credit itself, the necessary resources of around DM 12.5 billion mainly being raised through increased taxation.

Table IV.7 **Public Debt**

	Market credit raised				Debt at the end of the year	
	1989	1990	1991	1992	1989	1992
Borrowers						
Regional administrative bodies	25.8	112.2	106.8	103.0	928.8	1 346
General budgets						
Federal Government	15.4	51.6	30.2	20.3	490.5	611
Länder	7.3	19.2	24.1	34.7	309.9	387
Local authorities ¹⁾	2.1	4.2	15.1	16.4	121.4	157
Special budgets						
ERP special fund	1.1	2.4	6.9	8.0	7.1	24.5
'German Unity' fund		19.8	30.7	23.8		74.5
Credit fund		14.9	-0.2	-0.3		92
Others	15.7	29.8	67.5	86.6		
Treuhandanstalt		4.3	19.9	30.5		107
Bundesbahn/Reichsbahn	1.3	4.4	7.3	13.4	44.1	56.5
Bundespost	2.0	4.8	10.3	15.4	66.2	96.5
Federal promotion banks	12.4	16.3	30.0	27.3		

1) Including credit raised by a group of two or more local authorities.- 2) New GDR budget debt between 1st July 1990 and 2nd October 1990, which was to be taken on by the credit fund on 3rd October 1990 as part of the total budget debt.

Sources: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Deutsche Bundesbank.

Until now the two state-owned railways (the *Deutsche Bundesbahn* and the *Deutsche Reichsbahn*) have had separate budgets. The two merged in January 1994 and have since been transformed into a shareholders company, the state still holding 100 per cent of shares. The debts accumulated by then totalling over DM 70 billion will then be taken over by a separate fund.

Table IV.8 **Plant and Equipment in East German Industry Before the Monetary Union**

	Industry	Manufacturing		Other industries	
		Total	Equipment		Buildings
Plant and equipment ¹⁾ in billion Marks					
at 1985 prices	800	502	292	210	298
Conversion factor ²⁾	0.68	0.68	0.60	0.80	0.68
Plant and equipment ³⁾ converted into billion DM					
at 1990 prices	546	342	175	167	204
Transfers ⁴⁾	-	-	-17	17	-
Exceptions ⁵⁾	-227	-130	-46	-84	-97
Gross 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 prices	319	212	112	100	
between 1 and 5 years old	100	69	52	17	
6 years old and older	219	143	60	83	
Net 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 prices	224	144	78	66	
West Germany					
Gross 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 prices		1,134	675	458	
between 1 and 5 years old		342	286	56	
6 years old and older		792	390	402	
Net 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 prices		628	383	244	
East Germany					
Gross 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 prices		19	17	22	
between 1 and 5 years old		20	18	30	
6 years old and older		18	15	21	
Net plant and equipment in billion DM					
at 1990 prices		23	20	27	

1) Average values for 1989.- 2) Value at 1990 replacement prices.- 3) Values for the beginning of 1990.- 4) 10% of the equipment has been added to buildings.- 5) Obsolete plant and equipment which do not comply with environmental and labour requirements.

Sources: GDR Statistical Office; DIW calculations.

3.4 *The capital stock in East Germany*

Expenditure on building up a new and efficient capital stock is often also included in the costs of German unification. This, however, overlooks the fact that the necessary investment can to a large extent be financed by

profits, provided national income is growing.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deal with some aspects of the East German capital stock. These include its size and quality at the beginning of German unification, its devaluation due to the excessively rapid adjustment of wages to the West German level, and the estimation of the 'required' new capital stock and the public funds needed for this.

In 1989 GDR industry had fixed assets of 800 billion marks at 1985 GDR prices. It is unclear what this figure means, however. Firstly, this capital stock must be translated into DM, and then it must be determined to what extent it can still be used profitably under market conditions. After converting the valu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lower prices for investment goods in the West and depreciating obsolete capital, a figure of DM 319 billion (at 1990 prices) is reached for the gross capital stock.⁵⁵ The more rapid the adjustment of East German wages to the West German level, the higher the additional depreciation of the capital stock. The increases in wages realized since the GEMSU caused additional plant closures of DM 130 billion by the end of 1992 in manufacturing industry alone. This reduced the gross capital stock in manufacturing to DM 120 billion. Under optimistic assumption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wage increases) it could double again within the next six years, for which investment of around DM 150 billion would be necessary. In such a scenario around half of the previous figure of 3.5 million jobs in manufacturing could be maintained in the long term.⁵⁶

